

# 서울대학교 60년사

서울대학교 60년사 편찬위원회 편

서울대학교

# 서울대학교 60년사

SEOUL NATIONAL UNIVERSITY SINCE 1946

서울대학교 60년사 편찬위원회 편

서울대학교

편찬위원장

李泰鎭(인문대 교수)

편찬부위원장

鄭容郁(인문대 교수)

편찬위원

宋基豪(인문대 교수)

金容德(인문대 교수)

朴明圭(사회대 교수)

金慶烈(자연대 교수)

李秉基(공대 교수)

金完培(농생대 교수)

鄭肯植(법대 교수)

金基奭(사범대 교수)

朴相哲(의대 교수)

朴泰均(국제대학원 교수)

편수원

金濟正(인문대 강사)

金慶來(인문대 박사과정)

洪誠珠(자연대 박사과정 수료)

吳 淵(인문대 조교)

편수보조원

朴俊炯(인문대 박사과정)

李民友(인문대 석사과정)

李正善(인문대 석사과정)

鄭忠實(인문대 석사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60년사

## 기념사

겨레의 뜻으로 기약한 이 날  
누가 조국으로 가는 길을 묻거든  
눈 들어 관악을 보게 하라.

서울대학교가 지나온 발자취는 시련과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척박한 대지에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서울대학교는 격동의 20세기를 거쳐 근대화된 세계 지평의 한 굽이를 넘어왔고, 이제는 학문적으로 세계와 더불어 경쟁하는 대학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 같은 빠른 발전은 대학 구성원의 부단한 노력과 더불어, 근대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는 국민 모두의 간절한 염원과 애정 어린 뒷받침이 이루어낸 결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진 우리 민족 고유의 학문 전통을 계승하고 새로운 학문 연구의 물결을 받아들여 1946년 국내 최초의 국립종합대학교로 출범한 서울대학교가 지난 60년 동안 지나온 흔적을 되돌아보는 것은 과거에 대한 회상이나 빠른 발전상에 자족하기 위함이 아니라, 과거와의 대화를 통해 현재의 모습을 평가하고 역사의 도정 속에서 미래를 설계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역사를 돌이켜 보았을 때 서울대학교는 인재 양성과 학문 연구에 있어서 국가의 발전을 선도해 왔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세계화라는 무한경쟁 속에서 선진국의 유명대학들과 견주어 손색없는 초일류 대학으로 도약할 시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학문적 수월성을 확보하고 창조적인 지식을 생산하여



우리 사회의 미래를 밝히는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자 새로운 도전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가 하나의 샘물에서 시작하여 커다란 강을 이루었다면, 이제는 바다로 나아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세계와 인류를 위해 봉사하는 세계 일류대학으로 용비해야 합니다. 미래의 발전된 서울대학교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실천적 의지에 사회의 따뜻한 애정과 관심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서울대학교의 발전을 견인해 오신 여러 선학(先學)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에 간행되는 서울대학교 60년사는 지난 2년간 편찬위원회가 심혈을 기울여 노력한 결과 그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60년사 간행을 위해 애쓰신 편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편찬위원과 편수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성과가 21세기의 서울대학교와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을 밝혀주는 훌륭한 지침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06년 10월 15일

서울대학교 총장

이장무

서울대학교는 2006년 10월 15일로 개교 60주년을 맞이한다. 60년은 동아시아에서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그동안의 발자취를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하나의 획기라고 할 수 있다.

본교는 개교 60주년을 맞이하여 2004년 6월 8일에 부총장을 위원장, 기획실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개교 6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 추진위원회에서는 2005년 2월 24일에 6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서울대학교 60년사를 편찬하기로 하고 그 계획을 수립하였다. 2005년 3월 30일 편찬위원장을 비롯한 편찬위원들이 위촉됨으로써 ‘서울대학교 60년사편찬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조금 늦은 출발이었지만, 곧 편수원 및 편수보조원을 선정하고 본부 2층에 편찬위원회 사무실을 마련하여 자료 수집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편찬 작업에 착수하였다.

그동안 몇 차례 편찬위원회를 열어 서울대학교 60년사의 체제와 편찬 방향을 결정하였다. 먼저 『50년사』까지 사용된 편년체 대신 분류사 체제를 새로 도입하였다. 기존의 편년체에서는 획일적으로 시기구분이 되어 있어 분야별 특징을 나타내기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 또 시기별로 특정 분야의 비중이 너무 크고 그에 따라 다른 분야의 서술이 부족하거나 편의적으로 누락되어 버리는 단점이 있었다. 이를 분류사 체제를 도입함으로써 보완하고자 하였다.

또 하나의 특징은 분야별 5부 체제로 하면서 기존에 없던 공간(캠퍼스) 부문을 제1부로 추가한 점이다. 공간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공간 개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각 부문들의 활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지금까지 서울대학교의 전사(前史)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아, 일부 단과대학은 서울대학교 전체와는 별개로 자신들의 역사를 일제 강점기 이전의 역사로 소급하여 설명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60년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장에서 전사 부분을 서술하여, 근대 이후 대한제국의 국립대학교 설립 구상과 그것이 일본에 의해 좌절되고 식민지적으로 개편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로써 한국 근대의 국립대학교 구상이, 일제 강점기 경성제국대학을 비롯한 고등 교육 기관을 거쳐, 광복 이후 국립서울대학교의 설립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설명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하였다. 이 체계가 우리 근대사의 흐름과 각 단과대학의 시원에 대한 이해에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마지 않는다. 이밖에 독자 친화적인 서술을 지향하고, 서술 내용을 분야별로 체계화하고, 공간·문화·연구 등 기준에 비교적 소홀히 다루었던 분야에 대한 서술을 확대하여,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 교사(校史)를 만들고자 노력하였다.

편찬위원회는 위와 같은 편찬 방향 아래 좋은 교사를 만들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편찬위원회의 역량 부족, 시간과 자료의 부족 등으로 미진한 점도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점은 이후의 교사에서 보완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이번 편찬 사업을 이끌면서 교사 편찬실의 상설화의 당위성을 절실하게 느낀 점이 자리를 빌려 밝혀 두고 싶다. 개교 주년을 1~2년 앞두고 편찬위원회를 급히 조직하여 황급히 자료 수집에 나서는 방식은 이제 더 이상 반복되지 말아야 함을 절실하게 느꼈다. 서울대학교의 커진 살림이 더 이상 이런 방식을 되풀이 할 수 없게 한다. 이제는 어느 상설기구가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상의 기록들을 모아 매년 충실한 연감(年鑑)을 발행하고 주년이 되면 그것에 근거해 교사를 편찬하는 체제를 만들어야 할 때가 되었다. 자료 수집 단계에서 외국의 저명한 대학들이 수집권에 달하는 규모의 교사를 가지고 있는 것에 접해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었다.

이번 60년사가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먼저 이 책의 기획부터 시작하여 전체 과정에서 전폭적으로 후원해주신 총장님과 기획실장을 비롯한 기획실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편찬 작업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부분인 자료 수집에 도움을 주신 본부 각 부서와 기록관, 대학신문사, 중앙도서관 등 각 기관 관계자들께도 감사드린다. 그리고 표지 디자인에 사용할 작품을 제공해주신 미술대학교 동양화과 김병중 교수님, 그리고 많은 원고를 넉넉지 않은 시간에도 좋은 책자로 만들어주신 서울대학교출판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서장을 공동집필해주신 서울대학교 병원사연구실 전우용 교수와 국방대학교 노영구 교수, 그리고 1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본서를 집필한 편수원들, 자료 정리와 부록 작업 등 힘든 일을 도와준 편수보조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2006년 10월 15일  
서울대학교 60년사 편찬위원회 위원장  
이태진

기념사	iii
간행사	v
<b>서장</b>	1
제1절 서울대학교의 전사: 한국 근대의 국립대학 구상과 경성제국대학	1
1) 개항 이후 신교육 기관의 설립	1
2) 갑오 교육 개혁과 학제의 정비	5
3) 대한제국기 대학 설립 구상과 그 좌절	8
4) 일제 강점기 민립 대학 설립 운동과 경성제국대학 설립	13
5) 경성제국대학의 변천	16
제2절 서울대학교 60년의 개관	19
1) 창건과 시련 속의 발전(1946~1960년)	19
2) 경제 발전과 대학 종합화의 모색(1960~1975년)	26
3) 대학 종합화와 대학 자율의 진통(1975~1994년)	33
4) 지식 기반 사회로의 전환과 연구 중심 대학의 모색(1994~2006년)	38
<b>제1장 캠퍼스의 변천</b>	49
제1절 초창기의 캠퍼스	49
1) 기억의 공간	49
2) 국립종합대학교의 탄생과 분산된 캠퍼스	56
3) 파괴와 재건	63

제2절	종합캠퍼스의 구상 · 건설 · 이전	70
	1) 종합화의 구상	70
	2) 관악종합캠퍼스 마스터플랜	78
	3) 종합캠퍼스의 건설과 이전	86
	4) 남겨진 공간	93
제3절	캠퍼스와 환경	97
	1) 종합화 이후의 캠퍼스	97
	2) 캠퍼스의 확충	104
	3) 미래의 대학, Eco-campus!	114
제2장	대학의 심장, 도서관	123
제1절	초창기 도서관	123
	1) 도서관 설립	123
	2) 한국전쟁과 도서관	125
	3) 도서관 정비	129
제2절	도서관의 종합화와 그 이후	133
	1) 종합화 계획과 관악 캠퍼스로의 이전	133
	2) 종합화 이후의 도서관	136
	3) 도서관과 학생생활	140
제3절	지식 기반 사회와 도서관	143
	1) 도서관의 변모	143
	2) 전산화 사업의 추진	147
	3) 지식 공유의 장으로	150
제3장	정보화	155
제1절	정보화의 추진	155
	1) 정보화의 도정	155
	2) 정보 기반의 구축	159
제2절	교육, 학술 연구, 행정의 정보화	164
	1) 교육의 정보화	164
	2) 학술 연구의 정보화	168
	3) 행정의 정보화	173
제3절	정보와 문화	177

제 2 부  
운 영

1) 캠퍼스 정보 문화	177
2) 정보화 비전	183
<b>제1장 운영 체제의 변화와 기구 개편</b>	189
제1절 국립서울대학교의 설립과 초기의 대학 운영 (1946~1953년)	189
1) 국립서울대학교 창건	189
2) 개교 초의 행정 기구와 운영 체제	192
3) 정부 수립 이후의 대학 운영	198
제2절 환도 이후 기구 개편과 대학 운영(1953~1975년)	201
1) 국립학교설치령에 따른 기구 개편	201
2) 평의원회의 설치와 운영	204
3) 서울대학교설치령의 제정과 종합화의 준비	206
제3절 종합화와 대학본부의 역할 강화(1975~1987년)	207
1) 종합화와 대학 관리 조직의 강화	207
2) 1980년 대학 자율화의 시도와 기구 변화	212
제4절 대학 자율화와 운영의 효율성 추구(1987~2006년)	216
1) 자율화와 효율성의 확대에 따른 기구 개편	216
2) 대학 운영 체제의 개선	225
3) 대학 행정의 효율화와 분권화	231
<b>제2장 대학 발전 계획의 수립과 추진</b>	237
제1절 캠퍼스와 대학 운영의 종합화: 서울대학교 종합화 계획	238
1) 종합화 계획의 수립 과정	238
2) 서울대학교 종합10개년계획의 수립	240
3) 서울대학교 종합10개년계획의 추진	242
제2절 학문의 대학, 민족의 대학, 세계의 대학: 서울대학교 발전10개년계획	247
1) 서울대학교 발전10개년계획(1979년)	247
2) 학사조정위원회의 대학개혁구상	249
3) 서울대학교 발전10개년계획(1983년)	253

제3절	국제 수준의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의 발전: 서울대학교 발전장기계획(1987년)	255
	1) 서울대학교 발전장기계획의 수립 경위	255
	2) 서울대학교 발전장기계획의 내용	257
	3) 발전 계획의 수정 작업과 서울대학교 2000년대 미래상(1995년)	264
	4) 서울대학교 장기발전구상(1998년)	268
제4절	세계 수준의 종합 연구 대학 지향: 서울대학교 장기발전계획(2002년)	270
	1) 교육부의 국립대학발전계획(2000년)	270
	2) 블루리본패널(교육개선패널)의 활동	273
	3) 서울대학교 장기발전계획(2002~2011년)	276
제3장	교수 사회의 변천	285
제1절	교수 인사 제도 변천과 임용 상황	285
	1) 초창기 교수진과 한국전쟁기의 수난	285
	2) 교수 임용 기준의 법제화와 증원	290
	3) 교수 공개 채용 제도 확대와 재임용제 실시	298
	4) 교수 정년 보장 제도의 시행과 업적 평가 강화	303
제2절	총장 선출 제도의 변화	325
	1) 이사회의 총장 선임	325
	2) 정부 임명제 하의 교수회 동의권 여부	326
	3) 총장 직선제의 실시	328
	4) 간선제 전환 논의와 학내 구성원 참여 확대	331
제3절	교수 사회와 교수 단체의 활동	337
	1) 교수회의 활동과 대학 자치	337
	2) 교수협의회 결성과 대학 자율화의 시련	341
	3) 교수협의회를 비롯한 교수 단체의 활성화	345
제1장	입시 제도의 변화	357
제1절	초창기 '자율적' 입시제도(1946~1961년)	358
	1) 창건과 전입·입시제도	358
	2) 전쟁 기간 및 환도 후의 입시제도	361





제2절 대학입학예비고사와 대학입학자격의 국가 관리 (1961~1980년)	366
1) 대학입학자격 국가고시와 대학입학예비고사 실시	366
2) 대학입학예비고사 개정과 의무 반영 비율의 확대	370
3) 군 위탁 학사 편입생과 모국 유학생 교육	372
4) 대학원 입시제도 정비	376
제3절 대입 본고사 폐지와 모집 정원 급증(1980~1994년)	377
1) '7·30 교육개혁조치'와 대입 본고사 폐지	377
2) 졸업 정원제 실시와 모집 정원 급증	382
3) 논술 고사 시행과 선지원-후시험제 전환	386
4) 특례 재입학 제도 실시와 정원 외 입학 제도 개편	388
5) 석·박사 연계 과정 제도 도입	391
제4절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선발 방식의 다양화(1994~2006년)	392
1)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대학별 고사	392
2) 고교장 추천제와 특차 전형제 도입	398
3) '무시험 전형'과 수시 모집 실시	402
4) 지역 균형 선발 전형과 수시 모집 확대	407
5) 재외 국민 특례 입학제와 정원 외 입학제도	411
6) 대학원 정원 감축과 후기 모집 실시	413
제2장 교육 단위의 개편	417
제1절 개교와 '연립적 종합대학교' (1946~1961년)	418
1) 개교 당시 교육 기구	418
2) 전시연합대학과 국립학교설치령 제정	423
제2절 자연 과학 계열 학과와 특수 대학원 증설(1961~1974년)	428
1) 대학 정비 시책과 사범대학 축소	428
2) 근대화 추진과 자연 과학 계열 대학 확충	430
3) 특수대학원 증설	435
제3절 종합화와 교육 단위 개편(1974~1994년)	438
1) '교육연구 및 기구조직계획'과 교육 기구 개편	438
2) 실험 대학 참여와 계열별 모집	444
3) 종합화 이후 학과 증설과 명칭 변경	449

제4절	학부제와 모집 단위 광역화(1994~2006년)	453
	1) 대학원 중심 대학을 위한 학부제 구상	453
	2) 학부제와 모집 단위 광역화 추진과 갈등	459
	3) 학부 대학(University College) 구상과 전문 대학원 설치	469
<b>제3장</b>	<b>교과 과정의 정비</b>	479
제1절	초창기 교과 과정(1946~1961년)	480
	1) 창립과 새로운 교과 과정 도입	480
	2) 한국전쟁기 특수 교과목	482
	3) 교육법시행령 제정과 교과 분류	484
제2절	교과 과정 개편 노력과 교양과정부 설치(1961~1974년)	487
	1) 학사 자격 고시제와 학위 등록제	487
	2) 교과과정연구위원회 활동과 교과 과정 개편	488
	3) 교양과정부 설치와 운영	491
제3절	실험 대학 참여와 법정 교양 필수 과목 운영 (1974~1980년)	493
	1) 실험 대학 참여와 교과 과정 조정	493
	2) '면학 분위기 조성 시책' 과 법정 교양 필수 과목 증가	500
제4절	법정 교양 필수 과목의 지속과 계절 수업 시행 (1980~1990년)	506
	1) 신군부의 '수업 충실화 방안' 과 학사 운영 강화	506
	2) 이데올로기 비판 교육과 법정 교양 필수 과목 운영	508
	3) 계절 수업과 교양 과목 특별 시험 시행	511
	4) 교과 과정 개선 방안과 실험 과목 개발	514
제5절	자율화 진전과 기초 교양 교육 강화(1990~2006년)	518
	1) 법정 교양 필수 과목 폐지와 영역별 교양 교과 과정 체제 시행	518
	2) 일반 교육(general education) 원칙 강조와 핵심 교양 과목 신설	521
	3) 기초교육원 설립과 기초 교양 교육 강화	528
	4) 전공 선택의 기회 확대와 학사 관리 엄정화 방안	535
<b>제4장</b>	<b>장학 제도와 학생 교류 확대</b>	545
제1절	장학 제도 확충	545

1) 초창기 장학 제도	5 4 5
2) 장학 제도 정착	5 4 7
3) 장학 제도 개선	5 5 2
4) 대학원 장학 제도 강화	5 5 6
제2절 국내외 학생 교류 확대	5 6 1
1) 국내 대학 간 학생 교류	5 6 1
2) 외국 대학과의 학생 교류	5 6 4

## 제 4 부 연구

제1장 연구 활동의 흐름	5 7 5
제1절 초창기 연구 상황(1946~1962년)	5 7 6
1) 해방 직후 학문 연구 분위기	5 7 6
2) 부산 시절의 어려움과 각 학회의 발족	5 7 8
3) 원조를 통한 교육·연구 기반 재건	5 8 1
제2절 자립적 연구 기반 조성을 위한 진통(1962~1975년)	5 8 4
1) 1960년대 초반 연구 환경에 대한 논란	5 8 4
2) 연구 활성화를 위한 대학 내부의 개선 노력	5 8 8
3) 종합 발전 계획과 연구 여건 강화 모색	5 9 2
제3절 연구 활동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1975~1980년대 말)	5 9 7
1) 캠퍼스 종합화와 대학원 제도 개혁	5 9 7
2) 대학원 중심 대학론의 등장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특성화 시도	6 0 2
3) 1980년대 대학원 위기론 확산과 대학원 중심 대학론의 재부상	6 0 8
제4절 연구 중심 대학의 기치와 세계화의 지향 (1980년대 말~2006년)	6 1 3
1) 대학원 중심 대학의 연구 여건 조성	6 1 3
2) 세계화와 연구 중심 대학의 이상	6 1 5
3) 연구 중심 대학 서울대의 성과와 과제	6 1 9
제2장 연구 여건의 개선	6 2 5
제1절 연구 지원 제도의 정비	6 2 6
1) 연구위원회 발족과 제도 변화	6 2 6
2) 연구처 설치와 연구 행정 합리화	6 3 2
3)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재단	6 3 7

제2절	연구비 재원과 규모	638
	1) 초기 연구비 지원(초창기~1975년)	638
	2) 연구비 확충과 다각화(1975~1980년대 말)	645
	3) 대규모 연구비 지원(1980년대 말~2006년)	654
제3절	교수 연구 업적	680
	1) 교원 확충과 연구 업적의 증가(1962~1980년대 전반)	680
	2) 연구 업적의 급증(1980년대 후반~2006년)	682
제3장	연구시설의 발전	687
제1절	연구소(원)의 설립과 변화	688
	1) 초창기의 연구소 설립(1946~1974년)	688
	2) 종합화 이후 연구소 제도 변화와 설립 양상(1975~1987년)	690
	3) 연구소(원)의 급증과 통합(1988~2000년)	694
	4) 최근 연구소(원)의 제도 변화(2001~2006년)	704
제2절	연구소(원)의 운영과 활동	710
	1) 연구소(원)의 운영	710
	2) 연구소(원)의 연구 재원	714
	3) 연구소(원)의 연구 실적 개황	717
	4) 연구소(원) 평가 제도	720
제1장	대학 문화의 흐름	727
제1절	낭만적 대학 문화의 형성(1946~1960년)	728
	1) 설립 초기 '서울대생'의 모습	728
	2) 대학 문화와 대학가 형성	731
	3) 과외 활동의 시작	735
제2절	비판 의식의 성장과 청년 문화의 영향(1960~1975년)	737
	1) 종합화 이전 학생 특성	737
	2) 민족주의 고양과 청년 문화 논쟁	741
	3) 대학가 풍속 변화	743
	4) 축제와 서클 활동의 활성화	746
제3절	대항 문화(Counter-Culture)와 공동체 문화의 강화 (1975~1990년)	750

제 5 부  
학생

1) 관악 세대의 등장	750
2) 운동권 문화와 의식화	754
3) 공동체 문화의 활성화	757
4) 녹두거리의 형성	762
제4절 소비 문화의 확산과 대안 모색(1990~2006년)	765
1) '신세대' 학생과 대학 문화의 정체성	765
2) 축제의 다양화	771
3) 정보 통신 문화의 확산	776
4) 동아리 활동의 변화와 대안적 학생 활동	780
5) 서울대생의 일상과 녹두거리	784
제2장 학생회의 변천	791
제1절 학도호국단 창설과 학생 동원(1946~1960년)	792
1) 건설학생회 결성과 학도호국단 창설	792
2) 학도호국단의 활동과 학생 동원	795
3) 학도호국단 해체론의 확산	798
제2절 학생회 건설과 단과대학 학생회의 활성화(1960~1975년)	799
1) 학도호국단 해체와 학생회 건설	799
2) 학생회 조직과 활동의 어려움	802
3) 단과대학 학생회와 여학생회의 활동	805
제3절 학도호국단 부활과 학생들의 반발(1975~1984년)	807
1) 학도호국단 부활과 학생 활동의 위축	807
2) 10·26 사태 이후 학생회 재건 시도	811
3) 학도호국단의 민주화	814
제4절 학생회 재건과 대중화(1984~2006년)	816
1) 학원 자율화 조치와 학생회 재건	816
2) 학교 당국의 학생회 인정	819
3) 학생회론과 학생회 선거	821
4) 학생회 약화와 비운동권 학생회의 등장	825
제3장 학생 운동의 발자취	833
제1절 국대안 파동과 초기 학생 운동(1946~1960년)	834
1) 국대안 파동의 발생	834

2) 학생 이념 서클의 등장	837
3) 유근일 필화 사건과 이강석 편입 반대 운동	839
제2절 '선도적' 학생 운동의 전개(1960~1979년)	841
1) 4·19 혁명과 이승만 정권의 붕괴	841
2) 4·19 혁명 직후 계몽 운동과 통일 운동	845
3) 6·3 항쟁과 한일 회담 반대 운동	848
4) 3선 개헌 반대 운동과 교련 반대 운동	852
5) 반유신 민주화 운동	856
제3절 '대중적' 학생 운동의 발전(1979~1996년)	862
1) '서울의 봄'과 '서울역 회군'	862
2) 5·18 광주 항쟁과 '무림-학림 논쟁'	864
3) 학원자율화조치와 학생 운동의 조직화	867
4)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6·10 항쟁	871
5) 통일 운동과 1991년 5월 운동	873
6) 공개적 학생 정치 조직의 등장과 5·18 학살자 처벌 운동	876
제4절 학생 운동의 다양화와 새로운 전망(1996~2006년)	880
1) '한총련 사태'와 정치 운동의 약화	880
2) 반(反)성폭력 운동의 확산	885
3) 교육 자치 운동의 활성화	890

## 부록

1. 역대기관장명단	899
2. 현직교수 명단	917
3. 명예교수 명단	926
4. 전직교수 명단	933
5.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960
6. 통계	961
7. 연표	1025
참고문헌	1075
후기	1095

## 표 차례

〈표 1-1-1〉	종합캠퍼스 마스터플랜 공동 작업 분담표	84
〈표 1-1-2〉	종합캠퍼스 단계별 건설 공사 현황	91
〈표 1-1-3〉	건물 신축 사업 현황(1986~1996년)	104
〈표 1-1-4〉	두노한국21 대학원전용시설 구축 사업 계획	108
〈표 1-1-5〉	신축 건물 현황(1996~2005년)	112
〈표 1-2-1〉	도서관 명칭과 조직의 변화	144
〈표 1-2-2〉	도서관 시설 현황(2005년 12월 31일 현재)	144
〈표 1-2-3〉	서울대학교 도서관 전자자료구독비와 총 자료구입비	145
〈표 1-2-4〉	단계별 장서 확보 계획	146
〈표 1-3-1〉	서울대학교 정보화 추진 경과	157
〈표 1-3-2〉	멀티미디어 강의동 강의실·세미나실 현황	166
〈표 1-3-3〉	규장각 정보화사업 추진 현황	171
〈표 1-3-4〉	한국과학재단 지정 전문연구정보센터	173
〈표 1-3-5〉	행정정보시스템 재구축 로드맵	176
〈표 1-3-6〉	학내 단위기관 홈페이지 운영 현황(2006년 4월 1일 현재)	178
〈표 1-3-7〉	컴퓨터 공개 강좌 편성 내용(2006년 여름)	182
〈표 2-1-1〉	창립 당시 대학본부 기구표	196
〈표 2-1-2〉	1948년 문리과대학 기구표	197
〈표 2-1-3〉	1948년 의과대학 기구표	197
〈표 2-1-4〉	1948년 상과대학 기구표	197
〈표 2-1-5〉	1953년 대학본부 기구표	202

〈표 2-1-6〉	1959년 대학본부 기구표	203
〈표 2-1-7〉	1973년 대학본부 기구표	206
〈표 2-1-8〉	1976년 대학본부 기구표	210
〈표 2-1-9〉	1985년 대학본부 기구표	216
〈표 2-1-10〉	2006년 대학본부 기구표	221
〈표 2-3-1〉	교직원 현황표(1951년 11월 현재)	290
〈표 2-3-2〉	1953년 현재 교수 임용 자격 기준	291
〈표 2-3-3〉	직급별 경력 및 업적 요건(1971년 현재)	296
〈표 2-3-4〉	교직원 수의 변동	297
〈표 2-3-5〉	단과대학별 교수 대 학생 비율(1970년 6월 30일 현재)	298
〈표 2-3-6〉	신규교수 채용 인원(1976~1993년)	300
〈표 2-3-7〉	명예 교수 추대 현황(~1990년)	303
〈표 2-3-8〉	단과대학(원)별 신규 교수 임용 상황	306
〈표 2-3-9〉	신규 임용 교수의 성별 분포와 학위 취득 상황(1996~2005년)	307
〈표 2-3-10〉	재직교원 최종학위 취득국가 현황(2005년 12월 31일 현재)	308
〈표 2-3-11〉	교원 현황(2000~2005년)	309
〈표 2-3-12〉	전임 교수 수, 학생 수와 교수 1인당 학생 수의 변화 (1987~2005년)	310
〈표 2-3-13〉	성과급 연구 보조비의 차등 지급 실적(1998~2001년)	317
〈표 2-3-14〉	기금 교수 현황(1995~2005년)	320
〈표 2-3-15〉	BK 계약제 교수 임용 상황	321
〈표 3-1-1〉	각 학년도별 입학 상황(1946~1950)	360
〈표 3-1-2〉	입학 고사 과목 배점 상황(1974~1980년)	371
〈표 3-1-3〉	연도별 학사 편입 상황(1961~1976년)	373
〈표 3-1-4〉	연도별 군 위탁생 취학 상황(1961~1975년)	374
〈표 3-1-5〉	연도별 재일교포학생 취학 상황	375
〈표 3-1-6〉	1981학년도 입시 전형 요소와 반영 비율	379
〈표 3-1-7〉	1981학년도 대학별 정원 및 합격자 현황	381
〈표 3-1-8〉	1986학년도 입시 전형 요소와 반영 비율	386
〈표 3-1-9〉	1991학년도 사범대학 입시 전형 요소 및 반영 비율	387
〈표 3-1-10〉	특례 재입학생 현황(1987~1995년)	390
〈표 3-1-11〉	정원 외 입학 제도의 종류별 입학 현황(1986~1993년)	391



〈표 3-1-12〉	1994학년도 입시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	394
〈표 3-1-13〉	199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역별 배점	395
〈표 3-1-14〉	1995학년도 입시 전형 요소별 합격 공헌도의 비	396
〈표 3-1-15〉	1997학년도 입시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	398
〈표 3-1-16〉	고교장 추천제 추천 조건과 인원 변화	399
〈표 3-1-17〉	연도별 고교장 추천제 현황(1998~2001년)	400
〈표 3-1-18〉	2002학년도 정시 모집 전형 요소별 배점	405
〈표 3-1-19〉	2005학년도 지역균형 선발전형의 전형 요소별 배점	408
〈표 3-1-20〉	2005학년도 정시모집 전형 요소별 배점	409
〈표 3-1-21〉	2005학년도 수시 및 정시 모집 일반전형 모집인원 비율	410
〈표 3-1-22〉	정원 외 입학 현황(1993~2005년)	412
〈표 3-1-23〉	2001학년도 박사과정 입학 경쟁률	414
〈표 3-1-24〉	대학원 특차 모집 연도별 합격자 수(1998~2001)	415
〈표 3-1-25〉	2007학년도 석사·박사 통합 과정 전형 요소 및 배점	416
〈표 3-2-1〉	1960년 2월 27일 현재, 학부 교육 기구	427
〈표 3-2-2〉	대학 정원 변동 상황(1961~1973년)	432
〈표 3-2-3〉	종합화 직전의 교육 단위 편제표	434
〈표 3-2-4〉	연도별 대학원 설치 학과 수(1961~1974년)	437
〈표 3-2-5〉	1975년 종합화 이후 교육 기구 편성 상황	442
〈표 3-2-6〉	1974학년도 계열별 모집 내역	445
〈표 3-2-7〉	1974학년도 과별 모집 내역	446
〈표 3-2-8〉	기초 과정 학생의 대학별 소속(1975학년도)	447
〈표 3-2-9〉	1994년 현재 교육 기구 상황	452
〈표 3-2-10〉	대학원과정 학생 정원의 확대 계획과 실제 입학 정원	455
〈표 3-2-11〉	학사과정 학생 정원의 감축 계획과 실제 입학 정원	455
〈표 3-2-12〉	자연과학대학·공과대학·농과대학 학사과정의 학부제 진행 과정	462
〈표 3-2-13〉	2006년 현재 교육 기구 편제	464
〈표 3-2-14〉	전공 예약제 시행 분야 및 인원(2002~2006년)	468
〈표 3-2-15〉	2002~2006학년도 정시 모집의 모집 단위	470
〈표 3-3-1〉	기초 과정 학점 배분표(1974학년도 기준)	495
〈표 3-3-2〉	과목 영역별 최저 이수 학점	498
〈표 3-3-3〉	부전공 이수 졸업자 현황(1976~1985년)	500

〈표 3-3-4〉	계절 수업 실시 현황(1984~1990년)	5 1 3
〈표 3-3-5〉	교양 과목 특별 시험 응시자 및 합격자 현황(1984~1990년)	5 1 4
〈표 3-3-6〉	1993학년도 대학별 영역별 교양 과목 최저 이수 학점 배분표	5 2 0
〈표 3-3-7〉	단과대학별 기초 교양 교육 과정 이수 규정	5 2 7
〈표 3-3-8〉	2006학년도 1학기 교양 과정 종류별 교과목 수 및 강좌 수와 비율	5 2 9
〈표 3-3-9〉	관악초청 강좌 현황	5 3 4
〈표 3-3-10〉	복수 전공 학생 수 현황(1998~2005년)	5 3 8
〈표 3-3-11〉	2002학년도 연합 전공 과정 현황	5 3 9
〈표 3-3-12〉	연도별 연합 전공 지원자 및 최종 선발 인원(2003~2006년)	5 4 0
〈표 3-3-13〉	연도별 전과, 전학 현황	5 4 1
〈표 3-3-14〉	학사 경고, 학사 제명 받은 학생 수	5 4 3
〈표 3-3-15〉	연도별 계절 수업 현황	5 4 4
〈표 3-4-1〉	1959년도 각종 장학금 지급 통계표	5 4 7
〈표 3-4-2〉	장학금 수혜자 상황(1960~1974년)	5 4 8
〈표 3-4-3〉	서울대학교 대외 장학금 연도별 지급표	5 4 9
〈표 3-4-4〉	장학금 수혜자 상황(1975~1980년)	5 5 1
〈표 3-4-5〉	2002~2003학년도 대학원 장학금 지급 및 학비 감면 현황	5 5 5
〈표 3-4-6〉	2004~2005학년도 장학금 지급 현황	5 5 8
〈표 3-4-7〉	2006학년도 1학기 현재 교내·외 장학금 종류	5 5 9
〈표 3-4-8〉	국내 대학 간 학생 교류 상황	5 6 2
〈표 3-4-9〉	2006년 상반기 현재 국내 대학과의 학생교환협정 체결 현황	5 6 3
〈표 3-4-10〉	1997년 외국 대학과의 학생 교류 현황	5 6 5
〈표 3-4-11〉	2005년 교환 학생 파견 현황	5 6 9
〈표 3-4-12〉	국제학술교류 협정 체결 현황	5 7 0
〈표 4-1-1〉	해방 이후 약 10년 간 학회 창립 현황(1946~1955년)	5 8 0
〈표 4-1-2〉	1960년대 초반 본교 학술연구비	5 8 5
〈표 4-1-3〉	1960년대 초반 학술 연구 조성비	5 8 5
〈표 4-1-4〉	연구 교수 인원(1967~1974년)	5 8 9
〈표 4-1-5〉	단과대학 간행 학술지(1950~1960년대)	5 9 0
〈표 4-1-6〉	연구소 간행 학술지(1960년대)	5 9 1
〈표 4-1-7〉	교수 해외 파견 상황(1961~1975년)	5 9 1
〈표 4-1-8〉	교수 해외 파견 상황(1966~1975년)	5 9 2

〈표 4-1-9〉	대학원과 대학원 학생 추이(1965~1975년)	5 9 7
〈표 4-1-10〉	대학원 입학 정원 증원 상황(1979년)	6 0 6
〈표 4-1-11〉	1987년도 발전장기계획의 연구 활동 및 대학원 문제점 분석	6 1 2
〈표 4-2-1〉	연구처 학술 활동 지원 현황(1998~2004년)	6 3 5
〈표 4-2-2〉	학술연구용품 수입대행업무 실적(1988~2004년)	6 3 6
〈표 4-2-3〉	본교 예산 중 학술연구비 지원 현황(1953~1964년)	6 3 9
〈표 4-2-4〉	문교부 학술연구조성비 지급 상황(1963~1975년)	6 4 1
〈표 4-2-5〉	학문 분야별 학술연구조성비 지급 상황(1966~1972년)	6 4 2
〈표 4-2-6〉	단과대학별 문교부 학술연구조성비 지급 상황(1973~1974년)	6 4 3
〈표 4-2-7〉	서울대학교 학술연구재단 연구비 지급 상황(1968~1976년)	6 4 4
〈표 4-2-8〉	과학기술처 조사·연구개발 사업비 지급 상황(1967~1970년)	6 4 4
〈표 4-2-9〉	성곡문화재단 연구비 지급 상황(1969~1975년)	6 4 5
〈표 4-2-10〉	학술 연구비 지원 총액(1976~1989년)	6 4 6
〈표 4-2-11〉	문교부 학술연구조성비 지원 상황(1976~1989년)	6 4 7
〈표 4-2-12〉	문교부 정책과제연구비 지원 상황(1977~1989년)	6 4 8
〈표 4-2-13〉	문교부 기초과학(학문)분야 육성연구비 지원 상황(1977~1990년)	6 4 8
〈표 4-2-14〉	문교부 대학원 중점육성연구비 지원 상황(1979~1986년)	6 4 9
〈표 4-2-15〉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비 지원 상황(1983~1989년)	6 4 9
〈표 4-2-16〉	한국과학재단 연구비 지원 상황(1978~1989년)	6 5 0
〈표 4-2-17〉	본교 학술 연구비 구성(1978~1989년)	6 5 0
〈표 4-2-18〉	학술연구재단 목적사업비 지출 상황(1978~1985년)	6 5 1
〈표 4-2-19〉	학술연구재단 학술활동보조비 지급 건수(1978~1985년)	6 5 2
〈표 4-2-20〉	과학기술처와 상공부 연구비 지원(1985~1989년)	6 5 2
〈표 4-2-21〉	산학협동재단 연구비 지원 상황(1976~1989년)	6 5 3
〈표 4-2-22〉	한국학술진흥재단 학문 분야별 연구비 지원 상황(1986~2001년)	6 5 4
〈표 4-2-23〉	본교 연구비 총액(1988~2005년)	6 5 5
〈표 4-2-24〉	주요 재원별 학술연구비 지원 상황(1990~2005년)	6 5 7
〈표 4-2-25〉	본교 연구비 수주 실적(2001~2005년)	6 5 8
〈표 4-2-26〉	단과대학(원)별 연구비 총액	6 5 9
〈표 4-2-27〉	단과대학별 교수 1인당 평균연구비(1992~1994년)	6 6 0
〈표 4-2-28〉	단과대학(원)별 교수 1인당 평균연구비(1998~2004년)	6 6 1
〈표 4-2-29〉	교육부 세부 과제별 연구비 지원	6 6 2

〈표 4-2-30〉 한국학술진흥재단 세부 과제별 연구비 지원(1987~1998년)	6 6 4
〈표 4-2-31〉 BK21 사업비 지원 현황(1999~2004년)	6 6 6
〈표 4-2-32〉 본교에서 집계한 한국과학재단 세부 과제별 연구비 지원 현황(1989~1998년)	6 6 7
〈표 4-2-33〉 한국과학재단의 세부 과제별 연구비 지원 현황(1991~1994년)	6 6 8
〈표 4-2-34〉 한국과학재단의 세부 과제별 연구비 지원 현황(1995~1999년)	6 6 8
〈표 4-2-35〉 한국과학재단의 본교 연구비 지원 현황(2003년)	6 6 9
〈표 4-2-36〉 한국과학재단의 본교 연구비 지원 현황(2004년)	6 7 0
〈표 4-2-37〉 서울대학교 우수연구센터 지원 현황(1990~2004년)	6 7 1
〈표 4-2-38〉 분야별 우수연구센터 지원 수(1990~2004년)	6 7 2
〈표 4-2-39〉 서울대학교 우수연구센터 지원 현황(1990~1999년)	6 7 2
〈표 4-2-40〉 서울대학교 우수연구센터 지원 현황(1995~2005년)	6 7 3
〈표 4-2-41〉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교원 연구비 지원 현황(1986~1998년)	6 7 4
〈표 4-2-42〉 과학기술부 지원 창의적연구진흥사업단 선정 현황(1997~2004년)	6 7 5
〈표 4-2-43〉 한국과학재단 외 정부 지원 연구센터(단) 현황(2002~2003년)	6 7 6
〈표 4-2-44〉 서울대학교 발전기금과 기타 기관 연구비(1987~1998년)	6 7 7
〈표 4-2-45〉 내부 연구비 재원별 구성(1998~2005년)	6 7 8
〈표 4-2-46〉 교내 연구사업 지원 실적(2002~2004년)	6 7 9
〈표 4-2-47〉 교수 연구 업적(1962~1984년)	6 8 0
〈표 4-2-48〉 교수 논문 발표 상황(1962~1984년)	6 8 1
〈표 4-2-49〉 교수 저서 출판 상황(1962~1984년)	6 8 1
〈표 4-2-50〉 교수 번역 활동 상황(1962~1984년)	6 8 1
〈표 4-2-51〉 교수 연구 업적 상황(1988~2003년)	6 8 3
〈표 4-2-52〉 교수 단행본 출간 및 학술 논문 발표 상황(1988~2005년)	6 8 3
〈표 4-2-53〉 교수 해외논문 발표 상황(1988~1994년)	6 8 4
〈표 4-2-54〉 주요 단과대학(원) SCI(E) 논문 수(1999~2003년)	6 8 4
〈표 4-3-1〉 연구소 설립 현황(1946~1973년)	6 8 9
〈표 4-3-2〉 종합화 이후 연구소 소속 및 위상 변동	6 9 0
〈표 4-3-3〉 종합화 이후 연구소 명칭 및 위상 변동	6 9 1
〈표 4-3-4〉 연구소 설립 상황(1975년 종합화~1987년)	6 9 2
〈표 4-3-5〉 연구소 설치 상황(1987년)	6 9 3
〈표 4-3-6〉 연구소 현황 추이(1990~2000년)	6 9 4

〈표 4-3-7〉	연구소 설립 추이(1988~2000년)	694
〈표 4-3-8〉	연구소 증설 상황(1988~1998년)	695
〈표 4-3-9〉	공학 계열 공동연구소 용역연구비 수혜 현황(1988~1998년)	698
〈표 4-3-10〉	인문사회과학 분야 주요 본교직할연구소 용역연구비 수혜 현황(1990~1996년)	698
〈표 4-3-11〉	연구소 승격 상황(1989~1997년)	700
〈표 4-3-12〉	연구소 명칭 변경 상황(1989~1997년)	701
〈표 4-3-13〉	연구소 통합 상황(1995~1999년)	702
〈표 4-3-14〉	연구소 설치 현황(2000년 현재)	703
〈표 4-3-15〉	연구소 지위 변경(연구소에서 제외)	704
〈표 4-3-16〉	본부직할연구소의 주관 대학 변경 상황(2001년)	705
〈표 4-3-17〉	연구소 명칭 변경 상황(2001년 이후)	705
〈표 4-3-18〉	연구소 통폐합 상황(2001년 이후)	706
〈표 4-3-19〉	연구소 현황 추이(2000~2005년)	706
〈표 4-3-20〉	연구소 신설 상황(2001~2004년)	707
〈표 4-3-21〉	통합연구원 산하 소속연구소 현황(2006년)	708
〈표 4-3-22〉	연구소 설치 현황(2006년 8월 현재)	709
〈표 4-3-23〉	연구소(원) 연구 인력 추이(1986~2003년)	711
〈표 4-3-24〉	연구소(원) 연구 인력 추이(2004~2006년)	712
〈표 4-3-25〉	연구소(원) 시설 개황(1989~2004년)	713
〈표 4-3-26〉	지원기관별 연구소 연구비 수혜 상황(1985~2004년)	716
〈표 4-3-27〉	법정 연구소의 용역 연구비 수주 실적(1989~1998년)	717
〈표 4-3-28〉	1960년대 연구소 간행 학술지	718
〈표 4-3-29〉	본부직할연구소 학술지·논문집 발간 현황(1999년 현재)	719
〈표 4-3-30〉	연구소 연구 실적 상황(1986~2004년)	720
〈표 4-3-31〉	제1단계 이공계 연구소 평가(1994년)	721
〈표 4-3-32〉	제2단계 인문·사회·예체능계 연구소 평가(1995년)	722
〈표 4-3-33〉	연구소 분류별 배점 비교(2005년)	724
〈표 5-1-1〉	신입생 성비(1969~1979년)	751
〈표 5-1-2〉	신입생 주소지 상황(1975~1979년)	752
〈표 5-1-3〉	생활 수준 지각(知覺) 상황(1974~1979년)	752
〈표 5-1-4〉	신입생의 학비 충족도(1987~1999년)	766

〈표 5-1-5〉	여학생 신입생 비율(1991~2005년)	766
〈표 5-1-6〉	학생들이 생각하는 자신의 정치적 성향	767
〈표 5-2-1〉	서울대학교 학도호국단 조직도	794
〈표 5-2-2〉	서울대학교 학도호국단 예·결산 내역(1982년)	815

## 그림 차례

그림 1-1-1	1976년 12월 16일, 마로니에 공원에 세운 '서울대학교 유지 기념비'	5 0
그림 1-1-2	대학천 '세느 강' 과 '미라보 다리'	5 0
그림 1-1-3	동송동 대학가 플라타너스 길	5 1
그림 1-1-4	강의실만큼이나 자주 들르던 학림다방	5 1
그림 1-1-5	서울대학교의 상징이던 마로니에 나무	5 2
그림 1-1-6	동송동 캠퍼스 중앙도서관	5 2
그림 1-1-7	문리과대학 캠퍼스에 세워진 '4·19탑'	5 3
그림 1-1-8	동송동 법과대학 본관 정문 옆 '정의의 종'	5 3
그림 1-1-9	상과대학의 야외 휴게소, '향상림'	5 4
그림 1-1-10	사범대학 교정에 서 있던 '4·19 기념 동상'	5 4
그림 1-1-11	음악대학 분수대	5 5
그림 1-1-12	공릉동 공과대학의 명물이던 플라타너스 숲길	5 5
그림 1-1-13	'국대인' 발표 기사가 실린 1946년 7월 14일자 『동아일보』 지면	5 6
그림 1-1-14	동송동 문리과대학 캠퍼스 전경	5 7
그림 1-1-15	문리과대학 교사	5 8
그림 1-1-16	법과대학 교사	5 8
그림 1-1-17	미술대학 교사(동송동 캠퍼스 시절)	5 9
그림 1-1-18	연건동 의과대학 캠퍼스 전경	6 0
그림 1-1-19	공릉동 공과대학 캠퍼스 전경	6 0
그림 1-1-20	수원 농과대학 캠퍼스 전경	6 1
그림 1-1-21	종암동 상과대학 캠퍼스 전경	6 1

그림 1-1-22	을지로 5가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교사	6 2
그림 1-1-23	소공동 치과대학 교사	6 2
그림 1-1-24	음악대학 교사(연건동 캠퍼스 시절)	6 3
그림 1-1-25	전시인 1951년 부산 동대신동 대학본부	6 4
그림 1-1-26	1951년 부산 소개로 세운 문리과대학 가교사	6 4
그림 1-1-27	을지로 6가 약학대학 교사	6 5
그림 1-1-28	연건동 옛 경성의학전문학교 건물에 들어선 수의과대학	6 5
그림 1-1-29	1953년 10월 15일, 서울대학교 환수식	6 7
그림 1-1-30	전쟁 중 불타 버린 농과대학 제1호관	6 8
그림 1-1-31	미네소타 프로젝트에 의한 원조로 복구, 증축 공사 중인 농과대학 제1호관	6 9
그림 1-1-32	서울대학교 소속기관 조감도(『서울대학교 요람』 1959~60)」	7 2
그림 1-1-33	1960년대 초 '종합5개년계획'에 따른 본부 중심 지역의 종합 계획도	7 4
그림 1-1-34	1960년대 동송동·연건동 캠퍼스 전경	7 5
그림 1-1-35	이전을 거부하고 증축 공사 중인 중앙공업연구소	7 6
그림 1-1-36	종합6개년계획에 따른 서울대학교 메인 캠퍼스(동송동-연건동) 배치도	7 8
그림 1-1-37	종합10개년계획의 메인 캠퍼스 부지 확보 계획도	8 0
그림 1-1-38	1968년 8월, 서울대학교 종합캠퍼스 부지로 발표된 태릉 일대 조감도(계획안)	8 0
그림 1-1-39	골프장이었던 관악산 종합캠퍼스 부지	8 1
그림 1-1-40	'교육연구 및 기구조직분과위원회' 제1차 보고서에 수록된 캠퍼스 배치도	8 2
그림 1-1-41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응용과학연구소의 『서울대학교 종합캠퍼스 계획 수립 보고서』(1970년)	8 3
그림 1-1-42	최종 결정한 종합캠퍼스 마스터플랜의 캠퍼스 배치도	8 6
그림 1-1-43	1971년 4월 2일 서울대학교 종합캠퍼스 기공식	8 7
그림 1-1-44	종합캠퍼스 기공식 안내 팸플릿 「종합캠퍼스 기공」(1971년)	8 7
그림 1-1-45	종합캠퍼스 조성시 건설하였던 인문대학 건물 처마	8 8
그림 1-1-46	관악 캠퍼스 부지와 주변 환경의 변천 과정(1971년 12월~ 1975년 2월)	8 9
그림 1-1-47	1975년 1월 20일, 관악 종합캠퍼스로 이전을 위해 동송동 캠퍼스 교문을 나서는 수송 차량	9 2
그림 1-1-48	1975년 2월 28일, 관악 종합캠퍼스로 이사를 마친 후 동송동 캠퍼스 현판을 떼는 모습	9 3
그림 1-1-49	1973년 9월 3일 주택공사에서 발표한 '문리대 아파트 조감도'	9 4
그림 1-1-50	옛 동송동 캠퍼스의 대학본부 건물	9 6



그림 1-1-51	1984년 5월, 옛 문리과대학 교정에 조성한 마로니에조각공원	9 7
그림 1-1-52	1975년 서울대학교 관악 캠퍼스 전경	9 8
그림 1-1-53	1980년대 초 강의실 풍경	1 0 1
그림 1-1-54	환경대학원 유병림 교수 등이 제안한 『서울대학교 종합캠퍼스 시설장기발전계획』(1980년)	1 0 1
그림 1-1-55	‘풀리지 않는 삼각관계(?)’	1 0 2
그림 1-1-56	『서울대학교 발전장기계획 캠퍼스부문계획』(1987년)에 따른 연건 캠퍼스 계획도	1 0 3
그림 1-1-57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시설확충종합계획』(1992년)의 공학관 구상도	1 0 6
그림 1-1-58	『서울대학교 연구공원종합계획』(1994년)의 서울대학교 연구공원 조감도	1 0 7
그림 1-1-59	1992년 9월 농과대학 이전을 요구하는 수원 캠퍼스 농과대학 학생들	1 0 9
그림 1-1-60	『관악캠퍼스 발전관리기본계획』(1994년)의 지구 상세 계획에 따른 캠퍼스 지역 구분	1 1 5
그림 1-1-61	『서울대학교 캠퍼스부문장기계획』(2001년)의 관악 캠퍼스 권역 설계도	1 1 6
그림 1-1-62	늘어나는 건물, 줄어드는 녹지 공간	1 1 7
그림 1-1-63	‘에코캠퍼스’의 첫걸음, ‘걷고 싶은 거리’ 지도	1 2 1
그림 1-2-1	동숭동 문리과대학 캠퍼스의 도서관 전경	1 2 4
그림 1-2-2	1956년도 『서울대학교 요람』에 실린 『서울대학교 소속 기관 조감도』	1 2 4
그림 1-2-3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 평면도	1 2 5
그림 1-2-4	전쟁 당시 소개지 부산에서 임시로 개관한 도서관 전경	1 2 6
그림 1-2-5	서울대학교 부속도서관 분관 공학도서관	1 3 0
그림 1-2-6	1972년 패독(James A. Paddock)이 설계한 관악 캠퍼스의 새 도서관 단면도	1 3 4
그림 1-2-7	미국의 캠퍼스용역단 DPUA가 작성한 캠퍼스 배치도	1 3 4
그림 1-2-8	1975년 1월 관악 캠퍼스로 이전하는 도서관	1 3 6
그림 1-2-9	관악 캠퍼스 중앙도서관 전경	1 3 7
그림 1-2-10	1975년 8월 27일자 『대학신문』에 실린 도서관 중앙 통로 사진	1 4 1
그림 1-2-11	1981년 경제학과 학생 김태훈의 투신자살 시위 이후 쇠창살을 친 도서관 창문	1 4 3
그림 1-2-12	1994년 3월 24일 심약문고 기증식	1 4 7
그림 1-2-13	도서관 업무 전산화를 위해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 SORLARS 초기 화면	1 4 8

그림 1-2-14	도서관의 일반인 개방 문제를 다룬 『대학신문』 만평	151
그림 1-2-15	2004년 10월 14~15일 도서관 문제 해결 방안을 위해 열린 토론회	152
그림 1-3-1	1980년대 초 컴퓨터 터미널실	156
그림 1-3-2	1990년 8월 23일 서울대학교 근거리 전산망 개통	156
그림 1-3-3	2005년 6월, 서울대학교 슈퍼컴퓨터 3호기가 세계 51위임을 증명하는 인증서	161
그림 1-3-4	서울대학교 네트워크 구성도	162
그림 1-3-5	학생회관 내 모바일 서비스 센터	163
그림 1-3-6	24시간 정보 검색이 가능한 I. Space 내부	163
그림 1-3-7	멀티미디어 강의동(83동) 대형 강의실	165
그림 1-3-8	e-Learning 시스템의 구성 요소	167
그림 1-3-9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168
그림 1-3-10	규장각 홈페이지	169
그림 1-3-11	박물관 홈페이지	170
그림 1-3-12	농생명과학연구정보센터 홈페이지	172
그림 1-3-13	서울대학교 홈페이지	178
그림 1-3-14	보안관제실 전경	181
그림 1-3-15	서울대학교 정보화 비전	184
그림 2-1-1	부산 피난 시절의 학생과와 교무과	199
그림 2-3-1	정치경제학 전공 교수 영입 요구 대자보	300
그림 2-3-2	교수 윤리 헌장을 발표하는 정운찬 총장	323
그림 2-3-3	윤천주 제13대 총장 취임식(1975년 6월 12일)	327
그림 2-3-4	김종운 제19대 총장 취임식	330
그림 2-3-5	제20대 총장 선거 투표장(1995년)	330
그림 2-3-6	제20대 총장 선거 개표 모습(1995년)	330
그림 2-3-7	제24대 총장 선거(2006년 5월 10일)	336
그림 2-3-8	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 총회(1980년 3월 4일)	343
그림 3-1-1	1955학년도 입학 시험 실시 풍경	365
그림 3-1-2	1955학년도 입학 시험 합격자 발표 광경	365
그림 3-1-3	학사 과정 모집 정원과 지원자 추이(1953~1960년)	366
그림 3-1-4	학사 과정 모집 정원과 지원자 추이(1961~1974년)	369
그림 3-1-5	1973학년도 기계설계학과 입학시험 광경	371

그림 3-1-6	대학원 입학 정원 변화(1968~1980년)	3 7 6
그림 3-1-7	학부 모집 인원 추이(1986~1993년)	3 8 5
그림 3-1-8	1993학년도 입시 원서 접수 마지막날, 원서접수 창구가 설치된 체육관 앞 풍경	3 8 8
그림 3-1-9	학부 입학 정원 추이(1994~2006년)	4 0 1
그림 3-1-10	체육관에서 행해진 2006학년도 입학식 광경	4 1 0
그림 3-1-11	대학원과정 정원(입학생 기준) 증감 추이(1980~2006년)	4 1 3
그림 3-2-1	1975년에 열린 아카데미 플랜에 대한 회고와 반성 좌담회	4 4 1
그림 3-2-2	계열별 모집을 실시하던 1979학년도 과배정 발표 광경	4 4 9
그림 3-2-3	「서울대학교 장기발전계획」의 학부 대학, 일반 대학원, 전문 대학원 개념도	4 7 2
그림 3-3-1	1975년 대형강의실 수업 광경	4 9 9
그림 3-3-2	기초교육원과 교수학습개발센터가 함께 입주해 있는 61동 전경	5 3 1
그림 3-3-3	2006년 대형강의실 수업 광경	5 3 8
그림 3-4-1	학과과정 장학금 수혜율 및 1인당 수혜액 추이(1990~2006)	5 5 4
그림 3-4-2	2005학년도 2학기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장학금 수여식	5 5 7
그림 3-4-3	2006학년도 2학기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장학금 수여식 전체 기념촬영	5 5 7
그림 3-4-4	1997년 2월 24일 국립대학교간 학술교류협정 체결식 장면	5 6 1
그림 3-4-5	학생 단기 해외 연수 사업 실적	5 6 6
그림 3-4-6	대학원생 장기 해외 연수 현황	5 6 7
그림 4-1-1	미네소타 프로젝트 책임자 슈나이더(Arthur Schneider)와 공대·농대·의대 학장(1955년)	5 8 1
그림 4-1-2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 인도인수식(2006년 7월 14일)	6 2 1
그림 4-2-1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재단의 연구 채널	6 3 8
그림 4-2-2	교육부와 과학기술부의 사업 구분 모형	6 6 6
그림 5-1-1	1956년 종합체육대회 입장식	7 3 6
그림 5-1-2	1960년대 축제의 카니발 모습	7 4 6
그림 5-1-3	제1회 대학축전 포스터	7 5 7
그림 5-1-4	IFF에 참여한 외국인 학생들	7 7 5
그림 5-3-1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 모습	8 4 9

## 제 1 절 서울대학교의 전사(前史): 한국 근대의 국립대학 구상과 경성제국대학

### 1) 개항 이후 신교육 기관의 설립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근대의 학문 체계는 대체로 분석적이기보다는 통합적이어서 선형적으로 전제된 우주론, 세계론에 기반하여 세상 만물을 이해하고 해석하고자 하였다. 중세 동아시아의 학문 사상계를 지배했던 유교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일물(一物)이라도 지(知)치 못함은 유자(儒者)의 치(恥)”라는 태도를 견지해 왔다. 그런데 ‘수기치인(修己治人)’을 중시한 주자 성리학은 ‘수제치평(修濟治平)’에 이르는 입문(入門)의 도(道)를 ‘격물치지(格物致知)’에서 찾았다. 이는 『대학(大學)』이 가르친바 유자(儒者)의 요무(要務)였던바, 주자 성리학은 그런 점에서 중세적 사유 체계로서는 드물게 경험적, 실증적 태도를 강조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신성(神性)에 대한 불가지론적 태도가 일반화된 유럽에서는 ‘과학 혁명’을 거친 17세기 이후에 들어와서야 수집과 분류, 배열과 종합의 과정을 거치는 분석적 접근법이 일반화되었다.

유럽 지성계의 변화가 본격화된 17세기 말, 조선의 지성계 역시 청(淸)을 매개로 서구 학문과 접촉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18, 19세기를 거치면서 '실사구시(實事求是)'를 중시하는 학문적 태도가 힘을 얻었고, 그 과정에서 유자의 관심 분야가 확장되는 한편 특정 분야에 집중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주자 성리학적 세계관의 틀 내에서나마 학문의 분야별 독립 경향이 맹아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19세기 중반에는 『박물신편(博物新編)』, 『해국도지(海國圖志)』, 『영환지략(瀛環志略)』 등 서구의 신과학을 소개한 책자들이 유입됨으로써 조선 유자들의 서구 지식에 대한 이해도가 크게 높아졌다. 근대의 학문과 교육이 지식의 누적 체계로서의 학제와 지식의 분산 체계로서의 분과에 기반을 두고 정립되어 왔다고 할 때, 조선 후기에는 이미 분과화의 경향이 상당 정도로 진행되었던 셈이다. 학문과 교육을 중시해 왔던 조선 성리학의 전통에 덧붙여 조선 후기 지식계가 이루어 낸 성과는 서구의 근대적 대학 교육 제도를 도입하는 데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하였다.

조선 조야(朝野)의 지식인들이 고도로 전문화된 학문 체계와 고등 교육이 결합된 서구의 근대적 대학 교육 제도에 대해 구체적 정보를 얻게 된 것은 1881년에 일본으로 조사시찰단을 파견한 이후의 일이었다. 조사시찰단의 일원으로 세관 사무 시찰을 담당했던 이현영은 일본 문부성 관할의 각급 학교는 물론 농상무성과 육군성, 해군성, 공부성 산하의 특수학교에 이르기까지 소상히 소개하였다. 그의 보고에 따르면 당시 일본에는 이미 법학부, 이학부, 문학부, 의학부로 구성된 도쿄대학이 설립되어 있었고, 그밖에 경외(京外) 대학이 7, 공사립 중학이 784, 공사립 소학교가 28,025교에 달하는 상태였다. 한편 조사시찰단의 수행원 일부는 일본에 남아 신식 교육 기관에 입학하거나 미국으로 옮겨 유학하기도 하였다. 유길준, 유정수, 윤치호는 게이오기주쿠(慶應義塾) 및 도진사(同人社)에 입학했고, 김양한, 손봉구 등의 수행원들 역시 일본이나 미국의 대학에 입학하였다. 1883년경에 출간된 것으로 보이는 『만국교육설략(萬國教育說略)』은 서구 교육 제도에 관한 개략적인 내용과 더불어 일본 내 유치원, 소학교, 중학교, 고등보통학교, 사범학교, 대학교 등의 세부적인 법령 규칙도 수록하였다. 이 책에는 도쿄사범학교, 도쿄여자사범학교, 도쿄대학 등의 학제, 학생 및 교원 수, 교과 과정, 각종 비품의 구비 상황, 도서관 및 구비 도서 현황 등도 빠짐없이 정리되어 있어, 이 무렵에는 이미 일본이 채택한 학제 및 대학 교육에 대해 체계화된 정보를 갖추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조사시찰단 파견 반년 후, 정부는 신식 무기 제조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청국에 대규모 유학생단을 파견하였으며, 그와 별도로 국내에 신식 교육 기관을 설치하기 시작하였

다. 그 첫 번째가 1881년 5월에 창설된 별기군이였다. 오군영에서 선발된 별기군은 일본인 교관에게서 서양식 군사 훈련을 받는 한편으로 제한적이거나 외국어 및 기타 서양 지식을 전수받았다. 별기군 창설로 시작된 신식 군관 양성 과정은 임오군인폭동 후에도 계속된 군제 개혁을 통해 신식 군대 양성 과정으로 발전되었다. 이어 미국과 국교를 수립한 직후인 1882년 말에는 동문학(同文學)을 설립하고 영어 교육을 시작하였다. 또 1885년에는 서양식 병원으로 설립한 제중원에 의학당을 부설하고 학도를 모집, 영어와 기초 의학을 가르쳤다.

조선 정부가 새로운 교육 제도를 구상하는 데 또 하나의 중요한 참고가 된 것은 1883년 미국에 파견한 보빙사의 보고였다. 보빙사 일행은 미국 체류 중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공립학교와 대학을 방문하였으며 워싱턴에서는 교육국장으로부터 각종 교육 관련 자료를 기증받아 국내로 가지고 들어왔다. 귀환 후 부사(副使) 홍영식은 고종에게 미국 교육 체제를 본받아 교육 개혁을 추진할 것을 상주하였던바, 이를 계기로 1884년 9월, 고종은 푸트(Lucius H. Foote) 미국 공사를 통해 미국 정부에 군사 교관 및 왕립 영어 학교 교사, 그리고 왕실 농장 책임자를 보내 줄 것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미국 정부가 이 요청에 따라 헐버트(Homer B. Hulbert), 길모어(George W. Gilmore), 벙커(Delzell A. Bunker) 등 유니온신학교 졸업생 3명을 교사로 선발하여 조선에 보낸 것은 1886년 9월의 일이었고, 조선 정부는 이들이 도착하자마자 바로 육영공원을 설립하였다. 육영공원은 비록 영어 학교로 출범하였지만, 학생들은 구래의 역관 자제가 아니라 고관의 자제나 그들이 추천한 유생들로 구성되었고, 정부 또한 이 학교를 대학으로 발전시킬 구상을 갖고 있었다. 국왕은 이 학교에 대해 “언어, 문자뿐만 아니라 농상(農桑), 의학(醫學), 공기(工技), 상무(商務), 이용(利用), 후생(厚生) 등 각 방면의 기술 분야를 두루 설치하여 제각기 체계를 갖추도록 명”하였고, 교사들 역시 교과서를 편찬하면서 세계 지리, 정부 조직, 공공 재정, 산업, 교육, 종교, 군사학 등을 모두 포함시켰다. 미국인 교사들은 이 학교를 왕립 대학(Royal University)이라 불렀는데, 이는 학교 설립과 관련한 외교적 교섭을 담당한 뮐렌도르프(Paul George von Mollendorff)가 국왕의 의중을 그렇게 전한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1880년대 해관세나 객주 분세 등 외국 무역과 관련한 세수를 기반으로 신설된 대개의 신문물 도입 기관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육영공원 역시 1880년대 말부터 극심한 재정난에 빠져들었다. 임오군인폭동 이후 청국의 조선 속방화(屬邦化) 정책이 본격화하면서 정부의 재정 주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었던 것이 근본 이유였다. 길모어가 재

계약을 앞두고 봉급 인상을 요구하다 사직한 것이 1888년이었고, 1891년 제3기 계약 시에는 병커만이 교사로 남았다. 학생들 역시 이 신교육 기관에 대해 별다른 열의를 보이지 않았다. 연소한 현직 관리들로 구성되었던 좌원(左院)은 설립 후 얼마 되지 않아 유명무실해졌고, 1889년부터는 아예 관직이 없는 젊은 선비들만을 학생으로 받아들였다. 1894년 2월, 계약 만료일을 몇 달 남겨 두고 병커가 사임하자 육영공원은 사실상 폐지 상태에 이르렀다. 갑오개혁이 한창 진행 중이던 1894년 7월경까지도 육영공원의 명칭은 존재하였으나, 이 무렵 해군무관학교 교사 영국인 허치슨(W. du. F. Hutchison)에게 인계되어 한성영어학교로 개편되었다.

한편 조선 정부가 미국에 교사 파견을 요청해 두고 있던 1885년 8월에는 일본인 사쿠라이(櫻井德太郎)라는 자가 김홍집을 만나 대학교 설립을 권유하였다. 일본 공사관은 그의 대학교 설립 제의가 조선 내에서 김옥균 일파의 세력을 복구시키려는 의도에 따른 것이었다고 분석하였는데, 실현 가능성이 낮은 제안이기는 하였으나 대학교 교육을 통해 새로운 정치 세력을 육성한다는 구상은 김홍집 등에게 상당한 시사를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 1888년에는 일본에 망명해 있던 박영효가 국왕에게 올린 상소문에서 ‘(1) 소학교, 중학교를 설립하여 6세 이상의 남녀로 하여금 모두 입교하여 수학하도록 할 것, (2) 장학교(壯學校)를 설립하여 한문 혹은 언문으로써 정치, 재정, 내외 법률, 역사, 지리 및 산술, 이화학대의(理化學大意) 등의 서(書)를 역(譯)하여 소장(少壯)의 관인(官人)을 가르치고 혹은 팔도에서 장년(壯年)의 사(士)를 징모(徵募)하여 이들을 가르친다. 그 업(業)이 이루어짐을 기다려 과거 시험으로써 이들을 시험하여 문관에 채용할 것’ 등을 제시한 바 있었다. 이는 근대 교육 제도의 핵심인 의무 보통 교육 제도에 기초한 대학 제도의 창설을 제안한 것으로서, 그 취지는 갑오 교육 개혁 과정에서 상당 정도 수용되었다.

그런데 개항 이후 조선 정부와 조야의 지식인들이 서구의 신학문과 신학제, 특히 대학 제도에 보인 관심은 “부국강병”을 위한 실용적 지식과 인재의 양성에 중점을 둔 것이었다. 그들에게 서구의 유니버시티(university) 칼리지(college) 개념은 『대학(大學)』이 가르치는 “수제치평의 도”에 자연스럽게 용해되었다. 그에 따라 대학교는 신문물에 통달한 지식 관료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되었던 바, 육영공원에서 연소한 관리 및 관료 예비군에게 신학문을 가르친 것은 대학 교육의 실험이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이 무렵 조선 정부의 대학 구상은 돌출적인 성격을 면하기 어려웠다. 우선 초등 보통 교육에서 대학 교육에 이르는 누적적 지식 전수 체계에 대한 고려가 빠져 있었

다.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서구의 신지식과 기술을 도입하여 강병(強兵)과 식산(殖産)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하려 하였기 때문에 기존 교육 체계의 전면적 개편 없이 제한된 분야에서 대학 교육의 형식만을 실험적으로 도입하는 데 그쳤다. 그에 따라 전통적인 관리 임용 제도와 신교육 기관 사이에는 아무런 접점도 만들어지지 않았다. 학생들은 새로운 대학을 “수기치인의 학”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중인들에게 특화되어 있던 잡학을 전수하는 기관 정도로 보았고 육영공원의 실패는 그에 말미암은 것이었다.

둘째로 개항 이후 국가 주도의 근대화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대학은 공장이나 병원, 인쇄소 등과 병렬되는 일종의 신문물 실험 기관으로 자리매김되었고 그 때문에 수단으로서의 의미 이상을 갖지 못하였다. 당시 개혁 주도 세력이 견지한 동도서기론(東道西器論)은 서양 학문과 사상 전반을 학습의 대상으로 삼는 데에 심각한 제약 요인이 되었다. 그 탓에 근대 대학의 본질적 속성이라 할 수 있는 아카데미즘이 자리 잡을 여지는 거의 없었고 실용적 지식에 치중한 기능적 대학관(觀)이 만들어졌다. 이러한 기능적 대학관은 후발국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후 한국의 대학 교육에는 상당한 부담을 남겨 주었다.

## 2) 갑오 교육 개혁과 학제의 정비

1894년 7월 동학농민전쟁 진압을 빌미로 출병한 청군에 대응하여 군대를 파견한 일본은 그 달 10일, 일본 공사 오토리(大鳥圭介)로 하여금 남산 노인정에서 내아문 독판 신정희 및 협판 김가진, 조인승 등과 조선의 내정 개혁 문제에 관해 회담하도록 하였다. 이 회담에서 오토리는 전문 5조 27개 항의 내정 개혁 방안 강목을 제시하였는데, 교육 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는 ① 시세를 짐작하여 학제를 신정(新定)하여 각 지방에 소학교를 설립하며 자제를 교육케 할 것, ② 소학교의 설립 준비함을 기다려 점차 중학 및 대학을 설립할 것, ③ 학생 중 준수한 사람을 선발하여 외국에 유학시킬 것의 3개 항을 제시하였다.

당시 오토리의 개혁 방안 강목은 사안에 따라 10일 내에 처리할 것, 6개월 내에 처리할 것, 2년 내에 결행할 것 등으로 나뉘었는데, 교육에 관한 항목은 모두 시급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하였다. 조선 정부가 이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자, 일본군은 7월 23일(음력 6월 21일) 경복궁을 점령하고 고종을 인질로 삼은 후 군국기무처를 신설, 개혁



에 착수토록 하였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인 7월 30일, 군국기무처에서는 국정 전반에 대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였는데, 국내의 교육, 학무 등을 관장하는 기관으로 학무아문을 신설하고 그 산하에 총무국, 성균관 및 상교서원사무국(庠校書院事務局), 전문학무국(專門學務局), 보통학무국(普通學務局), 편집국, 회계국의 6국을 두도록 하였다. 이 중 보통학무국은 소학교와 사범학교에 관한 사무를, 전문학무국은 중학교와 대학교, 기예 학교, 외국어 학교 및 전문학교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 교육 개혁안은 비록 급조된 것이기는 하지만, 일반 보통 교육의 토대 위에 중등 교육과 대학 교육을 연속적, 누적적으로 배치하였을 뿐 아니라 외국어 교육, 전문 교육, 특수 교육을 각각 따로 설정함으로써 제도상으로는 일단 완비된 모양을 갖추었다. 특히 관리 재교육 기관이자 최고급 교육 기관이었던 성균관은 단지 선현의 사묘(祠廟)와 경적(經籍) 등을 보수하는 사무만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격하되어 교육 기능이 배제되었다. 당시 군국기무처에서는 아예 성균관을 폐지하고 바로 대학교를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했는데, 소학교조차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학을 설립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에 따라 일단 보류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 때 대학 설립을 보류한 것이 신학문에 대한 기초 교육이 미비하다고 판단한 때문만은 아니었던 듯하다. 이 무렵 제중원 의사로 있던 에비슨(Oliver R. Avison)은 일본인 교수진으로 채워지는 대학이 설립될 경우 조선의 독립에 장애가 될 것이라고 본 박영효가 군국기무처의 대학 설립 계획을 유보시키고 왕후를 설득하여 별도의 '사립대학'을 설립하려 하였다고 기록하였다. 왕후가 이에 찬동하여 자금을 내놓자 박영효는 언더우드(Horace Grant Underwood)로 하여금 미 선교부의 사업인 것처럼 위장하여 대학 설립 계획을 진척시켰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백악(북악산) 기슭에 부지를 마련하고 건물 신축과 교수진 확보 준비까지 진행하고 있던 차에 기밀을 알아차린 일본이 박영효를 모함하여 일본으로 망명하게 만들으로써 대학 설립안을 수포로 돌렸다고 하였다. 언더우드의 부인 릴리어스(Horton Lillias) 역시 비슷한 내용을 증언하고 있다. 그녀는 1895년 2월 2일 엘린우드(F. Elinwood)에게 보낸 편지에서, 박영효가 언더우드와 스크랜튼(William B. Scranton)에게 새로 설립할 대학에서 일본인들을 배제한다는 원칙 하에 비밀리에 선교사들을 활용한 '국립대학' 설립을 제안했다고 썼다. 또한 그에 소요되는 자금 3만 달러는 국왕이 마련하되, 일본인들이 눈치 채지 못하도록 미 선교부의 사업인 것으로 위장하며, 대학 설립이 마무리된 후에 가서야 왕립 대학임을 밝힐 것이라고 하였다. 요컨대 고종과 박영효 등은 일본이 지배할 가능성이 큰 관립 대학을 바로 만

들기보다는 미국 선교사들의 원조 하에 독립적인 왕립 대학을 만들고자 했던 것인데, 이 계획은 1895년 7월 박영효가 역모 혐의를 받아 재차 망명함에 따라 무산되었다.

일본이 고종의 대학 설립안을 언제쯤 눈치 챘는지는 알 수 없으나 1895년 1월의 「홍범 14조」에는 “國中聰俊子弟 廣行派遣以傳習外國學術技藝(나라 안의 총명하고 준수한 젊은이를 널리 유학시켜 외국의 학술과 기예를 배우게 한다)”라는 조항이 들어갔고, 이어 그 해 5월 양반 자제 192명이 ‘관비 유학생’으로 선발되어 일본으로 건너가 게이오기주쿠, 세이조학교(成城學校), 사관학교 등에 입학하였다. 이 일은 거의 일본 공사 이노우에(井上馨)의 지휘 아래 진행되었다. 각 학교마다 유학생 수용의 규정이 다소 달랐던 것 같기는 하나, 게이오기주쿠가 당시 학부대신 이완용과 맺은 유학생 위탁 계약에 따르면, ① 조선국 학부는 매년 일정한 학생을 일본 도쿄 게이오기주쿠에 유학시키고, ② 유학생은 초년(初年)에 300명을 보내고 그 이듬해부터 학생을 파견하는 일은 서로 연락한 후에 시행하기로 하며, ③ 유학생의 비용은 1인당 20엔씩을 유학생 파견 전에 게이오기주쿠에 보내기로 한다고 되어 있었다. 이 계약안에 대해 당시 제일 유학생 친목회는 “이는 다수 학생을 외국인 감독의 손에 맡기는 일이며 재권(財權)을 포기하는 일”이라고 지탄하였는데, 이는 이 유학생 파견 사업이 일본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 사업의 일환이라는 점을 정확히 포착한 데서 나온 것이었다. 제1기 관비 유학생은 고종의 러시아 공사관 이어(移御) 이후의 정세 변화 등으로 인해 지속되지 못하고 1896년 12월 전원 계약 해제로 대다수 유학생이 귀국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대한제국 선포 후에도 일본에 관비 유학생을 파견하는 사업은 지속되어 1897년에 64명, 1898년에는 47명이 선발되었지만, 이 때의 유학생 파견은 대한제국 정부의 신문물 도입 정책과 관련된 것으로서 제1기의 관비 유학생과는 그 취지가 크게 달랐다.

당시 고종과 일부 관료들이 일본의 조선 고등 교육 장악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던 상황에서, 일본은 조선에 따로 대학을 세우는 것보다는 영민한 젊은이들을 자국으로 데려가 가르치는 일에 더 흥미를 느꼈을 것이다. 관비 유학생 제도는 조선에 일본식 대학을 세우지 않고도 친일적 지식인 관료를 양성하는 방안이었으며, 아울러 대학 설립이나 기타 교육 개혁에 소요되는 재원을 유학생 파견으로 전용함으로써 그를 지연시키는 방책이기도 하였다.

박영효가 제안하고 고종이 승인했던 왕립 대학 설립안은 최종적으로 무산되었지만, 갑오 교육 개혁 과정에서 마련된 학제 개편안은 보통 교육 및 중등 교육 부문에서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었다. 1894년 7월에 군국기무처에서 마련한 교육 개혁 방안에 따라 우

선 서울에 소학교를 설립하여 7세 이상의 남아를 교육하겠다는 고시가 발표되었다. 이 고시가 나온 지 두 달여 뒤인 1894년 9월 18일 교동에서 사범학교와 부속 소학교가 개교하였다. 소학교령이 공포된 것은 그로부터 1년 가까이 지난 1895년 7월 19일이었으며, 이보다 앞서 같은 해 4월 16일에는 ‘한성사범학교관계’가 공포되었다. 이들 관계 공포를 계기로 교동에 설립되었던 학교는 한성사범학교와 부속 소학교로 개편되었다. 관립 소학교가 본격적으로 설립되기 시작한 것은 1895년 8월부터였고, 1898년까지 모두 9개가 설립되었다. 소학교령에서 부군(府郡)이 설립하도록 규정된 공립 소학교는 1896년 전국적으로 38개가 설립되었고, 1900년경에는 50여 개 교로 늘어났다.

소학교 졸업자를 수용하기 위한 중등 교육 기관으로 관립 중학교(나중의 경기중고교)가 설립된 것은 1900년 10월이었다. 소학교의 수업 연한은 심상과(尋常科)가 3년, 고등과가 2년으로서 총 5개년이었기 때문에, 1895년에 설립된 소학교의 졸업생이 진학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관립 중학교의 개교는 한편으로 학제상 최고 교육 기관으로 대학교가 설립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전제가 구비된 것을 의미하였다. 관립 중학교의 최초 졸업생이 1904년에 배출되었기 때문에, 이 무렵까지 대학이 설립되면 갑오 교육 개혁 당시에 구상한 학제안이 완전히 실현되는 셈이었다. 이밖에 갑오 교육 개혁에서 제안한 특수학교들도 축차로 설립되었다. 법관양성소 설치를 포함하는 ‘법부관계’가 반포된 것은 1895년 3월 25일이었고, 같은 해 5월 10일에는 ‘외국어학교관계’가 반포되었다. 또 고종의 러시아 공사관 이어(移御) 직전인 1896년 1월에는 칙령 제2호로 ‘무관학교관계’가 반포되었다. 이로써 소학교, 중학교, 대학교로 이어지는 기본 학제와 중등 정도의 전문 교육 기관이 병립하는 교육 제도가 마련되었는데, 이 교육 제도는 대한제국 선포 이후에도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지속되었다.

### 3) 대한제국기 대학 설립 구상과 그 좌절

1897년 10월 대한제국을 선포한 이후 고종은 전제 황권을 강화하는 한편, “구본신참(舊本新參)”의 원칙 하에 자력 근대화를 위한 제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교육 부문에서는 갑오 교육 개혁 과정에서 마련된 학제를 그대로 승계하는 한편, 상공학교, 의학교(이상 1899년), 광무학교(礦務學校), 전무학교(電務學校), 우무학교(郵務學校)(이상 1900년) 등 각종 전문학교 관제를 잇따라 반포하여 적극적으로 신기술과 신학문을

도입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군사, 의학 등 일부 분야에서 대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준비를 구체화해 갔다.

대한제국 정부의 대학교 설립 구상을 담은 최초의 관제는 1899년 7월 6일의 ‘원수부 관제’였다. 관제 제2관 제2조 군무국 분장 사항 제5항은 ‘육해군 대학교와 육해 측량에 관한 사항’이었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원수부 산하에 육해군 대학교를 설치하겠다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아울러 제4조 검사국 분장 사무에서 ‘각 병학교(兵學校)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군대 내에 병학교에서 육해군 대학교로 이어지는 교육 체계를 마련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때 바로 육해군 대학교 설립이 추진된 것은 아니었지만, 이듬해 3월 원수부관제가 개정될 때에도 관련 규정을 그대로 존치해 둬으로써 대학 설립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원수부관제와 거의 같은 때에 공포된 ‘의학교규칙’에도 대학교 설립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보다 앞서 1899년 3월 24일 칙령 제7호로 ‘의학교관제’가 발표되었는데, 이 관제에서는 의학교의 수업 연한을 3년으로 정해 두고, 학과 및 정도(程度)와 기타 규칙은 학부대신에게 위임해 두는 것으로만 규정함으로써 의학교가 전체 학제상에서 어떤 위치를 점할 것인지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관제 전문(前文)에서 “우리나라(我國)에 각종 학교를 대략 설치하였으나 의학교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아”라 하여 애초에는 외국어 학교나 사범학교 등 전문 교육을 실시하는 중등 정도의 학교로 구상했던 듯하다.

그런데 학부대신에게 위임된 의학교규칙은 관제 반포 후 5개월가량이 지난 1899년 7월 5일에야 공포되었다. 이 규칙은 의학교 운영의 세부 사항을 담은 것이지만, 관제가 확정하지 않았던 의학교의 학제상 위치에 대해서도 새로운 구상을 담았다. 규칙 제1관 제3조는 “수업 연한 3개년은 속성과나 학과를 간이적요(簡易摘要)로 주(主)하고 국내의 술이 발달한 후에는 연한을 개정(更定)하여 심절(深切)한 술업(術業)을 교수함이라”고 하였고, 제4관 제2조는 “입학을 원하는 자는 중학교 졸업장이 유(有)하고 …… 단, 현금 간만 중학교 졸업생이 무(無)하므로 문산(文算)이 초유(稍有)하고 재지(才智)가 총명한 자를 특시허입(特試許入)함이라”고 하여 당장은 속성을 주로 하는 전문학교의 지위로 설립하되,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대학으로 승격시키겠다는 의도를 내비쳤다. 이 규칙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당시 중학교 졸업을 입학 자격으로 규정한 학교로는 의학교가 유일하였다는 점이다. 갑오 교육 개혁에서 고등학교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중학교 졸업 자격을 명시하였다는 것은 의학교의 학제상 지위를 대학교에 비정하

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의과 대학에 대한 명시적 표현은 다음해인 1900년 11월에 내부령 제27호로 공포된 ‘의사규칙’에 담겼다. 이 규칙 제2조는 “의과 대학과 약학과에 졸업 증서가 유(有)하여 내부 시험을 경(經)하여 인가를 득(得)한 외(外)에 의업(醫業)을 행(行)치 물(勿)할 사(事)”라 하여 의사의 자격을 의과 대학과 약학과 졸업생으로 한정하였다. 앞의 의학교관제에서는 의학교를 졸업한 자에게 의술 개업 인허장을 부여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이 규칙은 의학교를 잠정적이거나 의과 대학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한 셈이다. 의학교가 개교한 지 2년 뒤인 1901년에는 의학교 부속 병원이 개원하였다. 이로써 의학교는 2년 간의 이론 교육과 1년 간의 임상 교육을 실시하는 의학 전문 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었고, 대학에 준하는 교육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였다.

관립의학교의 위상이 대학교에 준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관제 및 규칙에 나타난 운영 방침을 통해 대한제국기 국립대학 구상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우선 교수진은 원칙적으로 내국인만으로 구성할 계획이었다. 관제 제10조와 제11조는 외국인 교관의 임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경우에 따라 외국인을 고용할 수는 있되, 외국인 교관은 교수만 담당할 뿐 학생에 대한 지도 감독의 권한은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둘째, 교육비는 전액 국고에서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학생의 입학 자격은 중학교 졸업생으로서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로 하되 합격한 경우에도 추천인과 보증인을 세우도록 하였다. 이는 국비 무상 교육에 대한 안전장치로서 학생이 중도에 퇴학할 경우 보증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였다. 넷째, 중도 퇴학한 학생은 다른 관·사립학교에 입학할 수 없음은 물론 관리로도 서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학업의 지속성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학사 관리를 철저히 하여 매월, 매학기, 매학년 시험을 치르도록 하였으며 낙제생은 진급시키지 않거나 심한 경우 출학(黜學)하도록 하였다.

한편 이 무렵에는 언론에서도 대학 설립을 촉구하기 시작하였다. 황성신문은 1899년 9월 7일자 논설에서 유신(維新) 이래로 소학교, 사범학교, 외국어 학교, 무관학교, 법관 양성소, 의학교 등이 잇따라 설립되어 ‘천인지제(天人之際)에 달(達)한 학과를 확지(確持)하였으니’ 이를 기반으로 태학(太學: 성균관을 말함—필자)을 근대적 대학교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였다. 그렇지만 의학교는 중학교 졸업생이 배출된 1904년 이후에도 의과 대학으로 승격하지 못하였다. 1900년의 흥작으로 인한 재정난에 따라 각급 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이 곤란해졌고, 그 같은 상황에서 학생들이 규칙을 무시하고 무관학교 등으로 전학하는 일도 빈번히 일어났다. 더불어 입학생 모집에도 차질이 빚어져

1900년 이후로는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해 추가 모집이 일상화되었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내국인으로 구성된 교수진을 갖추지 못한 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애초 의학교는 내·외과를 비롯한 각종 의술을 전문으로 교수하는 곳으로 규정되었는데, 당시 서양 의학을 교수할 만한 한국인 의사는 전무한 실정이었다. 그에 따라 우선 서울에 찬화의원(贊化醫院)이라는 개인 병원을 내고 있던 일본인 후루시로(古城梅溪)를 교관으로 초빙하였는데, 그가 해부학 강의 시의 오류로 인해 학생들의 배척을 받아 물러나게 되자 다시 일본 군의(軍醫) 고다케(小竹武次)를 고빙하여 의학 교육을 전담시켰다. 의학교에 서양 의학을 가르칠 수 있는 한국인 교관이 고용된 것은 1900년 4월의 일로서, 이 때 일본 자혜의원 의학교를 졸업한 김익남이 새로 부임하였다. 그 후 1900년 10월 외국어 학교, 의학교, 중학교 졸업생을 모교에 수용하는 건이 공포되어 1902년 제 1회 졸업생들이 모두 의학교 교관의 자격을 얻었지만, 이는 명색뿐인 것으로서 실제로 교육을 담당한 이는 김익남 뿐이었다. 두 번째 한국인 교관은 러일전쟁 발발 이후인 1904년 12월에 임용된 유병필이었다.

의학교 교육이 나름대로 성과를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교수진을 구성할 수 없게 된 데에는 러일전쟁 전후의 국내외 정세 변화가 큰 영향을 미쳤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러일 간에 군사적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대한제국 정부는 군대의 강화에 주력하였고, 더불어 군진(軍陣) 의료에도 관심을 집중하였다. 1898년 2월 고종황제는 군부에서 관할하는 육군병원 설치를 재가하였는데, 이 병원은 1901년 11월에 병원 건축에 착공하였고 1902년 8월에 옛 비변사 자리로 이전하였다. 육군병원은 1903년 2월 10일 육군 위생원이라는 독립 기관으로 승격되어 대한제국 육군의 의무(醫務)를 총괄하게 되었는데, 이 무렵부터 한의들로 구성되어 있던 군 의료진이 의학교 졸업생으로 교체되기 시작하였다. 1904년에는 대대적인 군제 개편을 단행하면서 의학교 내 유일한 한국인 교관이었던 김익남을 군부 의무국장으로 임명하여 의학교 출신 군의들을 총괄 지휘하도록 하였다. 김익남의 뒤를 이어 의학교 졸업생 유병필이 의학교의 새 한국인 교관으로 임명되었지만, 김익남과 같은 권위를 지닐 수는 없었을 것이다.

한편 교육 부문에 대한 통감부의 간섭이 본격화하기 직전인 1905년 5월, 황제는 내장 원경 이용익으로 하여금 러일전쟁을 계기로 폐교된 전동의 아어학교(俄語學校) 자리에 보성전문학교를 설립하도록 하였다. 이 학교는 2년제의 법률학전문과와 이재학전문과(理財學專門科)를 두었으며, 그 해 9월 한성법학교 학생 22명을 인수하여 법률학전문야학과를 신설하였다. 1907년 1월에는 법률학전문과와 이재학전문과를 각각 법학과와

경제과로 개칭하고 수업 연한을 3년으로 연장하였는데, 궁극적으로는 이 학교를 대학으로 발전시킬 구상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07년 3월에 이용익이 사망하고, 1909년에는 학교 경영을 인수한 이용익의 손자 이중호마저 투옥됨으로써 이 학교는 천도교로 이관되어 버렸다.

을사늑약 이후 서울에 설치된 통감부는 대한제국 정부가 추진해 온 자력 근대화 사업의 성과들을 와해시키고, 그를 식민지적으로 재편하는 데 주력하였다. 교육 부문에서는 국·공립학교 체제의 근간을 뒤흔들어 고등 전문 교육 기관을 폐쇄, 축소하고 초등 교육 및 기초적인 실업 교육 기관 위주로 재편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선교사들에 의해 설립된 사립학교를 제외한 상당수 사립학교가 폐쇄되었고, 관립학교는 소학교, 중학교를 제외하고는 전부 개편, 또는 폐교되었다. 1906년 성균관을 대학으로 승격시키려는 대한제국 정부의 시도를 좌절시킨 통감부는 1906년 8월에 새로운 학교령을 제정하면서 각 외국어 학교를 관립한성외국어학교로 통합하였고, 관립농상공학교를 수원농림학교와 경성상업학교, 경성공업전습소로 개편하였다. 무관학교는 군대해산 이후 명목상으로는 존재하다가 1909년 결국 폐지되었다. 관립의학교 역시 1907년 대한의원 교육부로 개편되었다.

일본은 러일전쟁 직후 대한제국의 의료 및 의학 교육 체제에도 개입해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통감부는 1906년 2월 관립 병원이던 광제원 원장에 사사키(佐佐木四方志)를, 같은 해 7월에는 적십자병원 원장에 요시모토(吉本潤)를 각각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광제원, 의학교 부속 병원, 적십자병원 등 대한제국의 3대 신식 의료 기관을 모두 장악하였다. 통감부는 나아가 이들 3대 의료 기관을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1906년 4월 이토(伊藤博文)는 적십자병원에 나머지 두 병원을 합설하는 안을 내었는데 일본 군의총감 사토(佐藤進)가 내한(來韓)한 후에는 세 병원을 통합하여 하나의 최신식 대형 병원을 만드는 안으로 선회하였다. 이에 따라 대한의원 설립 계획이 추진되었으며, 병원 부지는 황실과의 협의를 거쳐 옛 경모궁 터로 결정되었다. ‘대한의원관제’가 반포된 것은 1907년 3월 13일이었으며, 동시에 의학교도 대한의원 교육부로 개편되어 교관과 학생 전원이 이관되었다. 1908년 10월에는 대한의원 본관 건물이 완공되어 병원 개원식이 거행되었다. 대한의원 교육부는 1908년 1월 대한의원 의육부로 개칭되었다가 강제 합병 직전인 1910년 1월, 다시 대한의원 부속 의학교로 개편되었다. 이 때 의학교의 교육 연한이 4년으로 확정되어 실질적으로는 대학에 다름없는 교육 기관이 되었지만, 연구와 교육이 우위에 서는 학교 부속 병원 체제가 아니라 진료 중심의 병원 중심 체제가 됨

으로써 교육과 연구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게 취급되었다.

통감부는 외국인이 설립한 기독교계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외교적 문제를 고려하여 별다른 간섭을 하지 않았으나 국·공립학교에 대해서는 초등 보통 교육과 중등 교육 기관만을 남겨 두고자 했다. 그 이상의 전문 교육은 정규 학제상에 위치 지우기보다는 공업전습소나 대한의원 교육부처럼 특수 기술교육 기관으로 격하시켜 버렸다. 『황성신문』은 1907년 4월 23일자 「당립대학교(當立大學校)」라는 논설에서 통감부 교육 개편이 지닌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학교 설치를 주장하였지만, 한국인에게 체계적인 고등 교육을 실시하지 않겠다는 통감부의 방침은 확고한 것이었다. 이로써 대한제국의 대학교 설립 구상은 최종적으로 좌절되었다.

#### 4) 일제 강점기 민립 대학 설립 운동과 경성제국대학 설립

일제는 한국을 강점한 직후 각 관청은 물론 교육 기관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지위 격하를 단행하였다. 고등학교는 고등보통학교가 되었고, 법학교는 경성전수학교로 개칭되었으며 대한의원 부속 의학교는 조선총독부의원 부속 의학강습소로 격하되었다. 이는 식민지 내 모든 시설의 격을 일본보다 한 등급 낮추려는 사고(思考)에 따른 것이기는 하였으나 이로써 식민지 학제 내에 대학이 설 자리는 원천적으로 부정되었다. 외국인 선교사들이 설립한 사립학교에서 중등 과정의 졸업생들을 위해 대학과(大學科)를 설치하는 사례가 있기는 하였으나, 총독부는 학제상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들 대학과, 또는 대학부의 공인을 일체 거부하였다. 사립학교 대학과 외에도 외국인 선교사들이 따로 대학교를 설립하려고 청원한 경우도 있었지만 모두 기각되었다.

총독부가 보통 교육과 초보적인 기술 교육 위주의 식민지 교육 방침을 부분적으로 변경하기 시작한 것은 제1차 세계 대전 중인 1915년에 이르러서였다. 이 변경의 일차적 목적은 제1차 세계 대전 기간 동안 급성장한 일본 자본의 식민지 진출에 필요한 현지 기술 인력의 양성에 있었지만, 더불어 수백 년 간의 우문정치(右文政治) 전통과 상당한 정도의 근대적 전문 교육 경험을 가졌던 민족을 무교육 상태로 방치하는 것이 통치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도 작용했을 것이다. 총독부가 '전문학교규칙'을 공포한 것은 1915년이었고, 총독부가 격하시켰던 대한제국기의 각종 국립·관립 전문 교육 기관들이 전문학교로 재개편되기 시작한 것은 그 이듬해부터였다. 즉 1916년에는 법관양



성소의 후신인 경성전수학교가 경성법학전문학교로, 관립의학고의 후신인 총독부의원부속 의학강습소가 경성의학전문학교로, 농상공학교의 후신인 공업전습소가 경성공업전문학교로 각각 개편되었으며, 1918년에는 역시 농상공학교의 후신인 수원농림학교가 수원농림전문학교로 개편되었다. 총독부는 관립 전문학교 체제를 구축하면서 이미 전문학교 또는 대학부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던 사립학교들의 지위를 격하시키는 작업을 병행하였다. 이에 따라 보성전문학교가 보성법률상업학교로 개칭되었으며, 세브란스연합의학고, 경신학교 대학부, 이화학당 대학과, 숭실대학 등 사립 고등 교육 기관들도 각종 학교로 격하되었다. 이 때 격하된 사립학교들도 ‘전문학교령’이 규정한 요건을 갖추면서 축차로 전문학교로 재승격하였지만, 이 과정을 거치면서 고등 교육에서 관립과 사립의 지위는 역전되었다.

1919년 3·1 운동 이후 조선에 대학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 총독부의 교육 정책은 다시 변화하였다. 무단적 식민 통치에 대한 전 민족적 저항에 부닥친 일본 제국주의는 ‘문화주의’의 미명 하에 민족 분할 통치 방침을 채택하였다. 교육 부문에서는 대학을 설립하여 조선인 상층의 교육열을 발산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 주고자 하였다. 물론 여기에는 대한제국기에 중등 교육, 전문 교육의 경험을 쌓은 조선인들이 다수 존재하여 대학 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았던 점도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그리하여 3·1 운동 이후에는 총독부에 의해 관립 대학이 준비되는 한편으로 민간에서는 민립 대학 설립 운동이 벌어졌다.

총독부가 조선에 대학을 설립하겠다는 뜻을 공표한 것은 1920년 말의 일이었다. 1920년 12월 23일 사이토(齋藤實) 신임 총독은 식민지 교육 정책 전반의 개혁안을 마련할 목적으로 ‘임시교육조사위원회규정’을 발표하고 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령 개정 작업에 착수하였다. 이어 1921년 1월에 개최된 제1회 조사위원회에서는 조만간 경성에 대학과 그를 위한 예비 교육 기관을 만든다는 총독부안이 심의되었고, 같은 해 5월 7일에 열린 제2회 조사위원회에서는 전문학교 및 대학 예과와 대학은 일본의 제도를 준용하기로 결정하였다. 1922년 2월에는 칙령 제19호로 ‘조선교육령’을 개정하여 조선의 학제와 일본의 학제를 통일시키는 방침을 채택, 전문 교육과 대학 교육 및 대학 예비 교육에 관한 규정을 삽입하였다. 즉 교육령 제12조는 “전문 교육은 전문학교령에, 대학 교육과 그 예비 교육은 대학령에 의하며 단, 이들 칙령 중 문부대신의 직무는 조선 총독이 이를 행한다. 전문학교의 설립과 대학 예과의 교원 자격에 관하여는 조선 총독이 정한 바에 의한다”고 하여 법적으로 대학 설립의 길을 열어 놓았다.

그러나 이때에 대학 설립에 대한 구체안이 바로 마련된 것은 아니었다. 총독부의 관립 대학 설립 계획은 민립 대학 설립 운동이 본격화된 이후야 구체적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민립 대학 설립 운동은 조선교육령 개정에 따라 식민지 조선에 대학 설립이 법적으로 가능해진 상황을 전제로 전개되었다. 먼저 1922년 2월 3일, 조선교육령 개정 소식을 접한 동아일보는 「민립 대학의 필요를 제창하노라」는 논설을 실어 이 무렵 동아일보가 제창한 문화주의, 민족 개량주의의 입장에서 민간 자금으로 대학 설립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그런데 민립 대학 설립 구상은 이미 1910년에도 한차례 나온 바 있었다. 1906년부터 전개된 국채 보상 운동은 1908년에 대한매일신보의 양기탁이 의연금 유용 혐의로 구속되면서 급속히 퇴조하였지만, 1910년 강제 합병 당시까지도 수합된 자금의 일부는 그 처리 방안을 찾지 못한 채로 남아 있었다. 강점 직후, 국채 보상 운동을 주도했던 윤치호, 류원표, 남궁억 등은 모금된 돈을 재원으로 민립 대학을 설립하고자 하였으나 총독부의 불허로 좌절된 바 있었다. 따라서 동아일보의 민립 대학 설립 제창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었고, 대학 설립 요구 역시 1890년대부터 지속되었지만 민립 대학 설립 운동이 바로 본격화되지는 못하였다.

각 지방 단위의 준비를 거쳐 조선민립대학기성준비회가 개최된 것은 동아일보의 논설이 발표되고도 거의 1년이 지난 1922년 11월 23일이었다. 이후 조선민립대학기성회는 각 지방에 자산가들을 중심으로 지방부를 조직하고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자금 모집이 지지부진했던 데다가 이 시기 민족 운동의 방향을 둘러싼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 간의 대립 등으로 인해 민립 대학 설립 운동은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점차 퇴조해 갔다. 이 외중에 1923년 하반기부터 총독부의 관립 대학 설립 계획이 빠른 속도로 진척되었다. 1923년 11월 27일 총독부는 관립 대학 설립의 구체안을 마련하기 위해 부령 제51호로 ‘조선제국대학창설위원회규정’을 제정하였고, 이듬해 1월 9일에는 총독부 학무국 내에 조선제국대학 부속 대학자료개설사무소를 설치하였다. 사무소는 하루 만에 교수 인선을 마치고 신입생 모집을 공고하였는데, 그 후 한 달 만에 제국 대학 예과 입학 지원 신청을 마감하였다. 애초 조선제국대학으로 설정되었던 교명은 이후 내지연장주의(內地延長主義)에 따라 경성제국대학으로 바뀌었고, 5월 1일 칙령 제103호로 ‘경성제국대학관제’가 공포되었다. 경성제국대학 예과는 관제 반포와 동시에 개교하였다.

이처럼 총독부의 대학 설립 준비는 학교명이나 대학 관제가 준비되기도 전에 교수진과 학생 선발을 마칠 정도로 신속한 것이었다. 이는 한편으로 총독부의 대학 설립이 조

선인 본위 고등 교육을 주창한 민립 대학 설립 운동의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와 관련된 때문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조선 내에 대학 설립을 위한 교육적 기반이 완비되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기도 하였다. 경성제국대학 예과 교사는 명성황후의 능침이 있던 청량리 홍릉 부근 구 황실 소유지에 지었고, 법문학부와 의학부는 대한제국기에 대한의원이 들어섰던 마등산 경모궁지에서 낙산 기슭에 이르는 일대에 건립되었다. 특히 의학부는 대한의원 교육부 때부터 총독부의원 부속 의학강습소, 경성의학전문학교로 이어지면서 계속 사용해 온 건물들을 교사로 사용하였다. 그런 점에서 경성제국대학은 법률적·제도적으로는 일제 식민지기에 새로 만들어진 것이라 해야 하겠지만, 역사적으로는 대한제국기 관립의학교로 시작된 자력 대학 설립 운동과 무관한 것이 아니었다.

### 5) 경성제국대학의 변천

1924년 5월 1일에 개교한 경성제국대학 예과는 중등학교 졸업자 중에서 학생을 선발하여 2년 간의 교육을 시작하였다. 3년제의 법문학부와 4년제의 의학부로 본과가 설치된 것은 예과 교육 기한이 끝난 1926년의 일이었다. 본과가 설치되면서 경성제국대학 총장에는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이 취임하였다. 당시 입학생 숫자는 의학부 66명(한국인 14명, 일본인 52명), 법문학부 84명(한국인 33명, 일본인 51명)이었다. 의학부는 의학과 단일 학과였고, 법문학부에는 법과·철학과·사학과·문과 등의 4개 학과가 있었다. 개교와 함께 교사(校舍) 등의 각종 시설물 건축도 본격화되었다. 1926년 2월 낙산 기슭에 법문학부 교사를, 5월에는 청량리에 예과 교사를, 1927년 1월에는 총독부의원 동쪽에 의학부 별관을, 이듬해 8월에는 의학부 본관을 각각 준공하였다. 1928년 6월에는 법문학부 본관이 새로 준공되었고, 1908년에 대한의원으로 건축되었던 총독부병원이 의학부 부속 병원으로 이관되었다.

일제가 경성제국대학에 의학과 법문학부를 먼저 설치한 것은 일차적으로는 식민지 개발 및 식민 통치의 안정화를 위해 이들 분야에서 고급 인력을 시급히 양성할 필요를 느낀 때문이었다. 서구 제국주의의 역사에 비추어 볼 때 식민지 지배 과정에서 가장 큰 곤란을 겪는 문제는 '질병', 특히 '풍토병'과 관련된 문제였다. 일본의 기후나 풍토가 조선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지만, 일제는 조선에 대한 식민지 지배를 항구화하고 일본인의 조선 이주를 장려하기 위해서도 풍토병 및 본초학(本草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았

다. 또 의학과 의료는 생체(生體)를 대상으로 하며, 환자 개개인의 고통을 경감해 준다는 점에서 다른 어떤 과학 기술보다도 그 효과가 직접적이고 가시적이었다. 의학은 총독 통치가 ‘근대적 문명화’를 통해 조선인에게 ‘시혜’를 베푸는 것을 과시하는 데에 매우 효과적이었다.

법문학부 설치에 대해서는 당시에 논란이 있었는데 일각에서는 법문학부보다 이공학부를 먼저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조선에 대한 시설 투자를 확대하려 한 대자본의 입장에서는 현지의 고급 기술 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했던 것이다. 그러나 총독부와 일본 정부는 식민 통치의 기반과 조건이 완전히 안정화되기 전에 고급 기술과 전문 지식을 요하는 산업시설이 조선에 들어서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1930년대 후반 조선에 대한 ‘대륙 병참 기지화’ 정책이 본격화하기 전까지, 일제는 일본 공업과의 수직적 분업 관련 아래에서만 제한적으로 조선의 공업화를 추진하고자 하였다. 경성제국대학에 이공학부가 만들어지지 않은 것은 1920년대 일제의 조선 산업화 방침을 그대로 반영하였다. 그러면서도 일제는 조선인의 전통적인 ‘기술 천시’ 풍조를 감안한 것이라고 사안을 호도하였다.

반면 법문학부는 학문 자체보다는 일제의 식민 통치를 정당화하고 강화하는 실용적 기술로 취급되었다. 수천 년 간 독자적 문화를 발전시켜 온 이민족을 지배하면서, 그들의 저항과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는 먼저 피지배자들의 문화와 관습을 이해할 필요가 있었다. 일제가 ‘구관(舊慣) 조사’라는 이름으로 조선의 사회 문화 현상 전반을 조사하기 시작한 것은 이미 강점 직후부터였고, 친일 귀족들로 구성된 조선총독부 중추원(中樞院)이 이에 관한 자문을 담당하기도 하였지만 조선식 ‘관행’과 일제의 ‘법규’ 사이에서 나타나는 일상적인 괴리는 법 집행에서 항상 문제로 제기되었다. 1910년대 일제의 ‘무단 통치’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 괴리를 폭력적으로 미봉하려는 방침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3·1 운동이 무단 통치에 대한 전면적 저항의 양상을 보이면서 전개되자, 일제는 이 방침을 더 이상 고집할 수 없었다. 그들은 3·1 운동 이후 문화 통치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조선인의 민도(民度)’, 또는 ‘조선인의 관습’을 고려한 통치로 방향을 선회하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조선의 법률 및 문화에 관한 학문적·실용적 접근은 불가결한 것이었다. 법문학부는 또한 조선의 실정에 익숙한 양질의 식민지 관리 양성이라는 현실적 요구에도 부합하였다.

이렇듯 경성제국대학 내에 의학부와 법문학부가 먼저 설치된 데에는 일차적으로는 일제의 식민 통치 상의 요구가 작용한 바 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대한제국기 한

국민의 고등 교육 경험이 이 두 분야에서 특히 많이 축적되었던 점도 고려해야 한다. 갑오개혁 직후에 설치된 법관양성소와 1899년에 설립된 관립의학고는 모두 대한제국기 최고 수준의 고등 교육 기관이었으며, 이들 교육 기관을 거친 사람들은 1910년대와 20년대를 거치면서 유학생 출신자들과 함께 식민지 하 한국 지식인 사회의 중추를 이루었다. 따라서 경성제국대학은 경험적 측면에서도 대한제국기의 고등 교육과 무연(無緣)한 것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경성제국대학의 제1회 졸업식은 1929년 4월에 개최되었다. 이때에 법문학부 제1회 졸업생 90명(한국인 22명)이 배출되었고, 이듬해에는 4년제 의학부가 졸업생 55명(한국인 12명)을 배출하였다. 이후 10여 년 간 경성제국대학은 1934년 3월 예과의 수업 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 것을 제외하고는 학교 편제나 운영, 졸업생의 민족별 구성 등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경성제국대학이 체제 및 운영상에서 큰 변화를 겪은 것은 1937년 중일전쟁 발발로 식민지 전시 총동원 체제가 구축되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먼저 1938년에는 이공학부가 신설되었다. 1930년을 전후하여 조선 북부 지역 일대에 대규모 수력 발전소가 건설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1930년대 후반부터는 군수 산업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중화학 공장들이 이 일대에 속속 들어섰다. 이 시기부터 일제는 식민지 조선을 대륙 침략을 위한 군수 산업 기지로 재편하는 데 주력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물론 이공학 분야에서 고등 교육을 이수한 전문 지식인을 양성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그런데 이 무렵의 일제는 군사 요원과 전문 과학 기술 요원을 함께 양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전선이 확대됨에 따라 대다수 젊은이들은 원하는 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전쟁터로 끌려 나가야 했다. 일제가 경성제국대학 내에 이공학부를 신설한 것은 이 같은 상황에 따른 부득이한 선택이었다. 조선 내에 건설되고 있는 중화학 공장들이 필요로 하는 고급 인력을 양성·공급하는 한편, 군사 요원으로 빠져 나가 버린 일본의 젊은 과학 기술 인력을 대체할 신규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그 목표였다. 그 연장선상에서 1941년에는 부설 연구소로 대륙자원과학연구소가 신설되었다. 1943년에 들어 일본의 패전이 분명해지자 일본 각의는 1943년 10월 12일에 ‘교육에관한전시비상조치방책’을 결정하면서 대학과 전문대학에서 문과계를 축소하고 이공계를 확대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에 경성제국대학은 예과의 문과를 축소하고 이과 정원을 확대하였으며, 본과에서도 이공 및 의학부의 정원을 50% 확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조치가 실효를 거두기도 전에 일본은 패망하였고, 더불어 경성제국대학은 해방된 한국민을 위한 교육적 자산이 될 기회를 얻었다.

해방과 함께 경성제국대학은 일시 기능이 마비되었다. 일본인 교수들과 학생들은 다 투어 귀국길에 올랐고, 얼마 되지 않는 조수(助手)와 학생, 직원들이 경성대학자치위원회를 결성하여 학교 기능을 근근이 유지해 나갔다. 1945년 9월 19일, 미군정은 대학의 행정 사무를 접수하는 한편 교명도 경성대학으로 개칭하였다. 이로써 경성제국대학은 공식적으로 소멸하였다. 경성제국대학은 1924년 설립된 이래 소멸할 때까지 법문학부 18회, 의학부 17회, 이공학부 3회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이들 중 한국인은 모두 810여 명이었다. 1946년 9월, 국립서울대학교가 발족하면서 경성대학은 서울대학교에 통합되었다.

## 제 2 절 서울대학교 60년의 개관

### 1) 창건과 시련 속의 발전(1946~1960년)

우리나라는 개항 이후 근대적 대학 설립을 도모하였으나 일제 침략으로 좌절되었다. 갑오개혁기 고종은 일본이 주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관립 대학보다는 독립적인 왕립 대학을 만들고자 하였으나, 일본이 관비 유학생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무산되었다. 이후에도 대한제국은 관립의학교와 병학교 등을 중심으로 근대적인 고등 교육 기관을 발전시키고자 하였으나, 일제는 이와 같은 대한제국의 근대화 사업의 성과들을 와해시키고 이를 식민지적으로 재편해갔다. 그러나 경성제국대학으로 대표되는 식민지기 고등 교육 기관의 설립은 역사적으로 볼 때 대한제국기 관립의학교로 시작된 자력 대학 설립 운동과 무관한 것이 아니었다. 즉 이미 조선 내에 대학 설립을 위한 교육적 기반이 완비되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기도 하였다. 한편으로 민립 대학 설립 운동 등 민족 본위의 고등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노력도 계속되었다.

1945년 8·15 해방으로 한국 고등 교육의 주권은 다시 우리의 손에 돌아왔다. 따라서 하루 속히 일제의 군국주의적 교육 정책을 청산하고 민족적 요청을 수용하는 새로운 교육이 필요하였다. 이 점에서 새 국가의 지도적 인물을 양성해야 하는 고등 교육 기관의 설립은 절실한 문제였다. 해방 당시 한국에 있던 고등 교육 기관으로는 일제 식민지기 고급 관리의 양성과 식민지 경영에 참여할 고등 지식인 양성을 목표로 한 경성제국

대학과 각 방면의 고급 직능인 양성 기관인 수 개의 각종 공립 전문학교, 그리고 수 개의 사립 전문학교가 전부였다. 게다가 경성제국대학 등에 근무하던 일본인 교수와 직원 등이 철수하면서 새로운 교수진의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당시 교육 시설의 부족, 교수진의 부족 등 열악한 조건으로 신국가 건설에 필요한 많은 고급 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다.

해방 후 남한에 진주한 미군정은 기존의 사립 전문학교를 대학으로 승격시켜 고등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관공립 학교를 통합하여 한 지역에 하나의 종합대학교를 설립하는 새로운 고등 교육 정책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1945년 12월경 미군정 학무국의 미국인 장교에 의해 경성대학을 확장하여 종합대학교를 만들려는 계획이 성안되었다. 그러나 이 방안은 그대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미 군정청 문교부(1946년 3월 39일 학무국에서 문교부로 승격)는 1946년 4월 시범적으로 경성대학 의학부와 경성의학전문학교의 통합을 지시했다. 그러나 경성대학 측에서는 경성의학전문학교 학생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자기들의 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주장했고, 경성의학전문학교 측에서도 장구한 역사를 가진 학교를 없앨 수 없다고 반대하였다. 이 같이 합병 문제를 둘러싸고 반대 운동이 시작된 1946년 7월 13일에 문교부는 경성대학과 9개 관립 전문학교 및 사립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를 일괄 통합하여 종합대학교를 설립한다는 소위 ‘국립서울대학교설립안’(이하 국대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통괄 기관으로 하나의 이사회를 두고, 그 아래에 총장과 부총장을 한 사람씩 두어 학교를 통괄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문리과대학, 사범대학, 법과대학, 상과대학, 공과대학, 예술대학, 의과대학, 치과대학, 농림과대학 등 9개 단과대학을 두고 그 위에 대학원을 두도록 하였다.

문교부는 당시 종합대학교 설립의 5가지 이점을 들었는데, 먼저 각 학교의 기존 건물 및 설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둘째 적은 수의 교수 및 전문 기술자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음을 들었다. 다음으로 국가 재정상 합리적이며, 학생들이 단과대학에 있을 때보다 더욱 다채로운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고, 대학원이 있어 학자 양성에 적합하다는 점을 들었다.

국대안 발표가 있자 여론이 분분한 가운데 일부 교직원과 학생들은 맹렬한 반대 운동을 펴기 시작했다. 7월 31일에는 전국교육자협회와 전문대학교수단연합회가 공동으로 전국교육자대회를 열고 국대안 철회를 요구하였다. 이어서 광산전문학교, 경제전문학교, 경성사범학교, 경성의학전문학교 등 통합 대상으로 되어 있는 전문학교의 일부 교

수나 학생들도 반대 운동에 가담하였다. 반대 운동 대표들은 러치(Archer L. Lerch) 군정 장관을 면담하고 국대안 철회를 요구하는 등 반대 운동은 점차 거세졌다. 국대안 반대 운동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문교부는 8월 22일 법령 제102호 ‘국립서울대학교설립에 관한법령’을 공포하였다. 국대안 발표에 이어 문교부는 9월 개학을 위해 곧 총장과 학장을 내정하였다. 이 때 총장에는 법학박사 앤스테드(Harry Bidwell Ansted) 대위, 대학원장에는 윤일선, 문리과대학장에는 이태규를 임명하는 등 국대안을 강행하고자 하였다.

국대안을 반대하는 집단행동이 본격적으로 확산된 것은 1946년 9월 관련 대학 학생들이 등록을 거부하고 제1차 동맹 휴학에 들어가면서부터였다. 상과대학을 시작으로 각 단과대학들이 동맹 휴학에 참가했는데, 이때 제기된 문제들을 보면 친일 교수 배격, 경찰의 학원 간섭 정지, 집회 허가제 폐지, 국립대 행정권 일체를 조선인에게 이양할 것, 미국인 총장을 한국인으로 대체할 것 등이었다. 1947년 2월 한 달 간은 제2차 동맹 휴학 기간으로 이 시기에는 국대안 반대 운동이 정치적 상황과 긴밀히 관련되어 좌우의 대결이 구체화되었고, 미 군정청에서는 급기야 국대안 문제를 남조선과도입법위원회에 상정하기로 결의하였다. 이 시기에 들어서면서 국대안 반대 운동은 학원 문제의 차원을 넘어 정치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이에 따라 좌우의 학생들이 국대안 문제를 중심으로 동맹 휴학 견지와 중지로 갈라지게 되었다.

1947년 3월 신학기가 시작되면서 서울대학교 일부 단과대학에서는 동맹 휴학을 중지하기로 결의하였다. 한편 서울대학교 이사회는 국대안을 둘러싼 문제를 종결하기 위해 6월 13일 제적 학생에 대한 조건부 복교를 결정했다. 제적 학생들이 복교원을 내면 각 대학 교수회에서 그것을 심사하여 합격 여부를 발표하였는데 복교원을 제출한 학생 가운데 10~20%는 복교가 불허되었다. 그리고 미국인 총장을 한국인으로 바꾸라는 국대안 반대 세력의 요구에 따라 1947년 10월에 제2대 총장으로 이춘호가 선임되었다. 이를 계기로 1년 동안 계속되었던 국대안 파동도 일단락되었다. 국대안 파동은 아직 우리 민족의 손으로 세운 정부가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체제의 종합 국립대학교를 무리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에 기인한다.

국대안 파동 이후 취임한 이춘호 총장은 서울대학교의 종합화를 위하여 수업의 단일화와 사무의 종합화 등에 힘썼다. 그러나 문리과대학과 법과대학 사이의 교수 연구실 분쟁으로 인해 1948년 4월 16일 사임하고 말았다. 교수 연구실 분쟁 사건은 법과대학이 청량리 교사에서 동승동으로 이전해 오면서 문리과대학 교수 연구실을 법과대학 교수



에게 배정함에 따라 문리과대학 교수들이 항의하여 일어난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종합 대학교로 출발한 서울대학교가 아직 연립대학교의 성격을 벗지 못하였음을 보여 준 사건이었고, 또한 이사회 중심의 대학 운영 체제의 문제점이 단적으로 표출된 사건이었다. 일제 식민지기 대학 운영을 교수가 담당하던 체제에서 해방 이후 이사회 중심으로 변하면서 내재된 갈등이 이 분쟁을 계기로 표면화하였다. 교수회의 반발로 말미암은 이 사건을 계기로 이사회는 대학 운영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였고, 점차 학장회의가 대학 운영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되었다.

1948년 5월 12일에 3대 총장으로 취임한 장리욱은 전 사범대학 학장으로 교육학을 전공하였고 민주주의 교육 이념에 철저하였다. 그는 대학 운영에서도 민주주의 교육 이념에 입각하여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문리과대학 교수들을 설득하여 교수 연구실 분쟁 사건을 해결하면서 대학의 정상적 기능을 회복하는 데 노력하였다. 그러나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대학 운영에 대한 국가의 규제와 개입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문교 당국과 갈등을 빚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장 총장은 이사회에 사표를 제출하고 총장직에서 물러났다. 이는 이후 정치적 이유로 국립대학 총장이 사임을 강요당하는 선례를 남기게 되었다.

해방 직후의 정치적 혼란과 문교 정책의 미숙, 그리고 국대안 파동과 그 후유증 등으로 인해 서울대학교 교수의 학문 연구 활동은 크게 위축되었다. 그렇지만 인문학과 사회 과학을 중심으로 새로운 학풍을 진작하고자 노력하여 일부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자연 과학과 공학, 의학 등의 경우에는 실험 시설 등의 미비로 인해 주로 교육 활동을 중심으로 조심스러운 모색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사회적 혼란과 학사 관리의 소홀 등으로 학생들은 자학자습과 독학으로 부족한 배움의 욕구를 충족하는 실정이었다.

국대안 파동이 수습되면서 학원은 안정을 찾아갔으나 학원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먼저 정부 주도로 학도호국단이 결성되었다. 정부 수립 이후 전개된 사상 통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학도호국단은 안호상 문교부 장관이 1948년 10월부터 추진하였고, 이듬해 1월 말까지 각 학교에 학도호국단이 결성되었다. 1949년 9월 27일 대통령령에 의하여 모든 학생 활동을 학도호국단의 조직을 통해서만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대학교도 학생들의 기존 단체를 해체하고 9개 단과대학에 학도호국단을 결성하고 그 연합체로서 서울대학교 학도호국단을 결성하였다. 정부 주도의 준군사 조직인 학도호국단 결성으로 인해 대학의 자치와 학문적, 사상적 자유 및 학생의 자치 활동은 제약을 받게 되었다.

다음으로 1949년 12월 31일에 공포된 ‘교육법’에 의해 고등 교육 기관에 대한 문교부의 지도 감독권이 규정되었다. 이와 함께 학생 선발, 수업, 졸업과 학위, 재정, 교원의 관리 등 구체적인 대학 운영에 대한 세부적 지침이 법제화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대학교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이사회의 존립 근거가 상실되었으며, 제한된 범위의 대학 자치조차도 문교부의 통제 아래 위협을 받게 되었다. 대학 자율의 확보는 이후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 정권의 무력 통일 전략에 의해 발발한 한국전쟁으로 개교한 지 4년이 되지 않았던 서울대학교는 큰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없었다. 서울은 전쟁 발발 사흘 만에 북한군의 수중에 들어갔고 한강의 다리가 끊기면서 대학의 피난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 많은 수의 교수와 학생들이 서울에서 발이 묶였고, 귀중한 각종 실험 기자재와 장서들이 고스란히 북한군 수중으로 넘어갔다. 그 결과 서울에 남아 있던 최규동 총장을 비롯하여 상당수 교수들이 납북되었고, 미처 피난하지 못한 많은 수의 학생들은 ‘의용군’이 되었다. 남쪽으로 피난한 학생들의 경우에도 적잖은 학생들이 학도병으로 전투에 참전하고 그중 22명의 학생들이 전사하는 등 그 피해가 컸다. 또 9·28 수복 이후에는 서울에 남아 있던 교수와 학생들이 부역 혐의로 조사를 받고 일부는 파면, 정직 등의 처분을 받거나 학교를 떠나게 되는 등 상흔은 매우 깊었다.

교수, 학생들에 대한 부역 심사는 이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즉 학술 연구 활동에서 사상의 자유도 명백한 한계를 가져야 한다는 분위기가 굳어졌다. 그러한 사상 통제책은 전란 중 더욱 강화되었고, 그것은 대학의 학문의 자유, 그리고 대학의 자치에 일정한 구속과 한계를 부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는 전란 이후 1950년대까지 그대로 이어졌다. 전쟁으로 인적인 피해와 함께 학교 시설도 적잖은 피해를 입었다. 예술대학 음악부 교사는 완전히 불타 없어졌고 이공계 대학의 경우에는 실험 시설이 완전히 파괴되었다. 전쟁이 끝난 이후 청량리의 이학부 실험실에는 깨어진 비커와 시험관 몇 개, 그리고 약품을 담은 병만이 널려 있었고 실험 기구들도 거의 파손된 상태였다고 한다. 부속 도서관의 경우에도 많은 도서들이 문리과대학, 법과대학, 박물관 창고 등에 흩어져 있었고, 심지어 일부는 가마니에 넣어진 채 운동장에 깔려 있기도 하였다.

1951년 봄부터 전쟁은 38도선 부근에서 밀고 밀리는 소강 상태로 접어들어 장기화될 조짐을 보였다. 이에 문교부는 1951년 5월 4일 문교부령 제19호로 ‘대학교육에관한전시특별조치령’을 공포하여 전시연합대학을 설치하였다. 이것은 지역별(부산, 대구, 전주, 청주, 대전, 제주)로 교수와 학생의 소속 대학을 불문하고 각기 피난지에서 전시연

합대학을 형성하고 교육이 가능하도록 한 조치였다.

피난지 부산에서의 고등 교육 실상은 너무나 비참하였다. 전란으로 인하여 많은 인적 손실이 있었으며, 시설이라고는 겨우 강의할 수 있는 가교사가 있을 뿐이었다. 이러한 여건에다 정부에서 취한 일련의 시책은 대학을 더욱 빈약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즉 1952년 9월에 새로운 조치로 국립대학교가 각지에 증설되었고 사립학교들도 그 규모를 크게 하여 종합대학교로 승격되는 예가 많았던 것이다. 당시의 여러 가지 사정을 살필 때 이러한 대학의 양적 증가는 상대적으로 질적 저하를 의미할 뿐이었다. 따라서 서울대학교의 연구와 교육 활동은 극히 부진한 형편이었다. 교수는 생활 보장이 되지 않아 호구지책에 급급하는가 하면, 학생들도 고등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온전한 대학 생활을 할 수 없었다.

피난 시절의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서울대학교는 그 기구를 확충하고 대학 운영에 대한 새로운 모색을 하는 등 꾸준한 발전을 계속하였다. 1953년 4월 ‘국립학교설치령’의 공포와 함께 예술대학의 음악부와 미술부는 각각 단과대학으로 분리 승격하였으며, 농과대학의 수의학부 역시 단과대학으로 승격하였다. 서울대학교는 이제 대학원과 12개 단과대학으로 구성되는 종합대학교로 확충되었다. 이와 함께 대학 운영의 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먼저 총장의 자문 기관적 성격을 갖고 대학 운영에 참여하는 평의원회를 교수와 교외의 인사들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다. 둘째로 교수회의 권위가 강화되었다. ‘교육공무원법’에 의해 총장과 학장은 당해 대학(교) 교수회의 동의를 얻음으로써 임명될 수 있으며, 조교수급 이상의 교직원의 임명, 승진에도 역시 교수회의 동의가 필요하게 되었다. 셋째 교수의 신분 보장이 법제화되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휴직, 정직, 전직되지 않도록 하였고, 현행범을 제외하고 소속 장의 동의 없이 학원 내에서 체포되지 않는다는 ‘불체포 특권’이 부여되었다.

한국전쟁으로 입은 시설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였다. 한국전쟁 이전 458동(62,527평)에 달하던 서울대학교의 건물 중에서 수리 혹은 재건해야 할 건물이 276동(24,313평)으로 이를 위해서는 4억 5천만 원의 재원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서울대학교 재건 시기인 1952년부터 1954년까지는 전국적으로 대학 인구가 전례 없이 확대된 시기였다. 이는 사립대학교의 양적 팽창과 함께 7곳에 지방 국립대학교가 신설되었기 때문이다. 전쟁으로 인하여 국방 예산이 대폭 증액되고 문교 예산은 상대적으로 축소된 상황에서 문교부는 격증하는 아동의 의무 교육에 급급한 실정이었다. 이에 더하

여 지방 국립대학교의 신설로 서울대학교에 대한 국고 지원은 이전에 비해 대폭 줄어들어 학교 재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서울대학교의 시설 재건을 위하여 정부의 충분한 지원을 얻는 데 실패한 최규남 총장은 미국 원조 당국과 여러 차례 접촉한 결과 정부 쪽에서 승인만 하면 원조를 하겠다는 미국 원조 당국의 승낙을 얻는 데 성공하였다. 그리하여 본교는 미국 원조 기관으로부터 30만 달러의 원조를 받게 되었다. 본교는 이 원조를 바탕으로 한 대규모 서울대학교 재건 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서를 문교부를 경유하여 미국 원조 기관에 제출하였다. 1950년대 대학 재건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미국 대외활동본부(FOA)의 지원에 의한 미국 미네소타 대학교와의 교류이다.

미네소타 대학이 주관한 서울대학교의 재건과 부흥을 위한 계획인 이른바 미네소타 프로젝트는 1955년에서 1958년 7월 31일까지 총 5백 4십 5만 1천 달러가 소요되었으며, 한국 정부 측에서 2백 6십 5만 달러를 보냈다. 이는 1954~1961년에 걸쳐 실시된 미국 정부 주도의 대한(對韓) 고등 교육 원조 총액의 78%에 달하는 것이었다. 지원 부문은 농업, 공업, 의학, 일반 행정학에 집중되었다. 이 교류를 통하여 서울대학교는 농과대학·의과대학·공과대학의 시설 재건과 행정대학원의 설치, 그리고 교수진의 자질 향상에 큰 도움을 받았다. 미네소타 프로젝트는 한미합동경제위원회에 의하여 1961년 9월 28일까지 다시 연장되어 기존의 농과대학, 공과대학, 의과대학 이외에 다른 단과대학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추가로 434만 달러가 원조되었다.

미네소타 프로젝트는 서울대학교의 교육, 연구 체제를 강화하는 데 매우 큰 의미를 가졌다. 그중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교수진의 재교육을 포함한 인재 양성 계획이었다. 이 계획을 통해서 서울대학교 교수 218명이 미네소타 대학에 유학하였다. 이들 중 15명이 박사 학위를, 71명이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를 통해 수준 높은 미국 학문을 수입함으로써 뒤떨어진 학문 수준을 짧은 시간 동안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미네소타 프로젝트를 통해 공과, 농과, 의과 등 이공 계통에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져 과학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고, 이는 1960년대 한국 공업화의 기반이 되었다.

1950년대 후반은 여러 분야에서 전란의 상처를 치유, 극복하여 안정을 도모하는 시기였다. 한편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유동적인 측면이 많이 있었다. 독재 정권의 억압과 사상 통제의 강화로 사상계와 학계가 위축될 수밖에 없었지만 고등 교육에서 이전의 자유방임적 전통의 영향이 강하게 남아 있어서 대학에 대한 국가의 규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다. 이는 1950년대 서울대학교 재건 과정에서도 잘 나타난다. 예를 들어 대

학 자치 즉 학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중심으로 한 대학 본연의 권리가 신장되었다. 대학 자치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서울대학교평의위원회의 성립으로 구체화되었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각 단과대학별로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수회가 설치되었다.

전후 재건을 통해 학교 시설과 운영, 연구 활동이 다소 자리를 잡아가면서 대학생들의 비판적 사회 운동도 활발해졌다. 학내의 여러 가지 학술, 문예 활동과 함께 학생의 사회적 발언의 강도도 자유당 정권의 부패가 노정되면서 더욱 강해졌다. 학생 운동은 특히 학도호국단 폐지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이는 대학인과 사회인들의 지지를 받았다. 대학생들의 사회 비판적인 의식과 활동이 이루어졌지만, 다른 한편으로 한국전쟁 이후의 빈곤과 혼란, 억압적 사회 체제, 그리고 사치 풍조의 확산 등으로 인해 대학생 사회에 무기력과 체념의 경향도 함께 나타났다.

1958년에는 보안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되고 정부에 비판적인 경향신문이 강제로 폐간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들은 보안법 반대 데모를 벌였고 대학생의 정치·사회의식은 전반적인 침체 분위기 속에서도 성장하여 갔다. 학생 이념 서클의 등장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였다. 이 과정에서 1950년대 전반에 형성되었던 천재적·영웅적 낭만성의 대중문화는 차차 쇠퇴하고 사회적·정치적 대중화의 경향이 나타났다. 사상계 등의 비판적 시사 잡지가 간행되고 인문·사회계 교수들의 글이 실리면서 비판적인 사상 경향이 두드러졌다. 이는 1950년대 후반 전반적으로 대학의 지도 이념이 부재한 상태에서 자유주의의 영향이 득세하고, 특히 자유주의의 이상을 바탕으로 사회 비판의 기운이 일어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1950년대 후반 대학생의 사회의식 성장은 1960년대 이후 민족주의의 고양과 한국적인 현실에 토대를 둔 연구 활동의 기초가 되었다.

## 2) 경제 발전과 대학 종합화의 모색(1960~1975년)

1960년대는 급격한 정치, 사회적 변화의 시대였다. 1960년 4·19 혁명과 이듬해 5·16 쿠데타로 시작된 1960년대는 민주화의 신장과 좌절, 근대 산업 사회로의 전환과 갈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격변의 중심에서 서울대학교에도 대내외적인 변화가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1960년 3월 15일 자유당 독재 정권의 부정 선거는 온 국민의 분노를 유발시켰고 이에 반독재 민주화 운동은 전국으로 번졌다. 대학생은 그 중심에 있었다. 4월 19일의 대규모 유혈 사태와 4월 25일의 각 대학 교수들의 시위에 수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동조하였다. 경찰의 시위대에 대한 발포로 다수의 시민과 학생들이 사망하였는데 서울대학교 학생 6명도 희생되었다. 결국 자유당 독재 정권은 4월 26일에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 선언으로 종말을 고하였다. 자유와 정의에 바탕을 둔 우리 역사상 최초의 민주주의 혁명인 4·19 혁명은 새로운 질서의 모색을 부단히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대학 사회는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우선 대학의 자치와 자율이 크게 신장되었다. 대학의 자치적 운영을 위한 첫번째 조치로서 부속 기관장의 임명권이 정부에서 총장에게 위임되었다. 학장을 임용할 때에도 총장이 지명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회에서 투표로써 후보자를 정하고 동의 투표를 통해 학장을 선출하도록 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진정한 자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학도호국단이 해체되고 단과대학 학생회와 총학생회가 결성되었다.

대학교와 학생들의 자율성이 크게 신장되면서 대학 정화 운동이 일어났다. 혁명 직후 학생들은 교수들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이른바 어용 교수 사퇴를 요구하였다. 학생들의 움직임은 교수진들과의 대립으로 한때 큰 파란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4·19 혁명 후 학생 활동 중 특기할 만한 것으로는 '새 생활 운동'이 있었다. 이는 문맹을 퇴치하고 새로운 민주 정신을 양양시키고자 하는 의식 개혁 운동이었다. 혁명의 주역이었던 학생들은 4·19 혁명을 유발한 정치·경제적 모순은 집권자와 집권당의 퇴진만으로 치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1960년 6월 10일 서울대학교 학생회는 국민 신생활 운동, 국민 계몽 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서울대학교 여학생회에서는 여성 신생활 운동 전개를, 문리과대학에서는 '농촌으로 가기 운동' 전개를 결의하였다. 또한 농과대학, 사범대학에 국민 계몽반이, 의과대학과 치과대학에 무의촌 진료반이 조직되어 '서울대학교 국민계몽대'를 결성하였다.

학생들의 계몽 활동이나 새 생활 운동은 4·19 혁명의 성과를 계승하면서 사회 활동에 참여하려는 의지를 가진 것이었지만, 당시 사회의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계몽 운동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1960년 말 국민 계몽 운동 및 새 생활 운동이 한계에 부딪치자 새로운 방법으로 사회에 참여하려는 방향 전환을 모색하였다.

우선 4·19 혁명 이후, 과감한 혁신을 주장하는 젊은 계층은 보수적 입장에 있는 일

반 정계의 노장층에 대해 세대교체론을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4·19 혁명이 사회 혁명화하지 못하고 정권 교체에 불과할 것 같은 조짐을 보임에 따라 세대교체론은 더욱 강하게 대두되었다. 1960년 11월에 가서는 세대교체 요구에서 한발 더 나아가 학생들이 주도하는 통일 운동이 막을 열었다. 일단의 학생들이 그때까지 금기시되던 중립화론, 남북 협상론 등을 골자로 하는 평화 통일론을 주장하고 나왔다. 이에 일단의 학생들은 1960년 11월 18일에 '서울대학교 민족통일연맹'을 조직하였다.

민족통일연맹은 1961년 5월 3일 대의원 총회를 열어 빠른 시일 안에 남북 학도 회담을 개최하고, 남북 학도 간의 기자 교류, 학술 토론 대회, 예술·학문·창작의 교류 및 체육 대회를 개최하도록 하자는 결의문을 발표하였다. 학생들의 남북 회담 제의는 사회에 커다란 파문을 던졌으며, 일부 학생들도 정면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그러나 결국 학생 주도의 통일 운동은 5·16 쿠데타에 의하여 좌절되었다. 이 후 한동안 사회 표면에서 적극적인 통일 논의는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1960년 4월의 빛나는 승리를 거둔 학생들의 기세는 끝없이 치솟았고, 이는 의식상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자신감에 넘친 학생들의 현실 참여 의식은 더욱 고조되었고 아울러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자유를 만끽하는 가운데 학원가에 민족주의의 뜨거운 열풍이 일었다. 이와 함께 일제 식민지기의 잔재를 청산하려는 학생들의 열기는 학문을 통해서, 혹은 사회 계몽 운동을 통해서 더욱 세차게 전개되어 1960년대 이후 한국 지성계의 흐름을 주도하였다.

4·19 혁명 이후 대학의 자치와 자율의 신장은 이듬해 5·16 쿠데타에 의해 큰 좌절을 겪게 되었다. 쿠데타를 주도한 일단의 장교들은 무력적 수단으로 정권을 장악하고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이들이 구상한 국가 주도의 사회 발전 계획에 따라 사회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국가 통제가 시행되고 민주주의적 질서는 일시 정지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행정 경험이 거의 없던 군부 인력에 의한 제도 개혁은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였고 이는 특히 문교 정책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군사 정부는 이전의 사회 혼란이 대학에 있다는 명분으로 대학의 방임 정책에 종지부를 찍고 교육에 대한 계획과 통제의 강화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포된 것이 바로 1961년 9월 1일의 '교육에관한 임시특례법'이었다. 이 법의 주요 내용 중 대학 교육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공립대학의 경우 동일 단위 지역 내에 유사한 학부, 학과를 가진 단과대학이 둘 이상 있을 경우 이들을 한 학교로 통합하도록 하였다. 서울대학교는 이에 따라 사범대학의 경우, 일부 학과를 남겨 두고 모두 폐지하도록 하여 교수 및 학생들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하였다. 다음으로 국·공립대학의 장 및 대학 교수의 임명권을 내각 수반에 맡기고 동시에 대학 교원의 임용은 교수자격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였다. 또 유능한 인재의 등용을 촉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교원의 정년을 65세에서 60세로 낮추어 교육계의 물갈이를 시도하였다. 세 번째로는 대학의 입학과 졸업에 대한 국가 관리를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대학 진학 희망자는 우선 대학입학자격 국가고시에 합격해야 각 대학이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시험을 볼 수 있었다. 졸업을 위해서는 국가가 시행하는 학사자격고시를 거치도록 하였다.

교육에관한임시특례법에 의한 대학입학자격 국가고시는 각 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입학시험으로 대행되어 각 대학은 자율적이고 전문적인 학생 선발의 여지를 가질 수 없었고, 각계에서도 반대 여론이 크게 일어났다. 또한 학사 자격 고시제도 그 내용이 너무나도 획일적이고 실시 방법도 강압적이었으므로 대학인들의 반발을 샀다. 이에 얼마 지나지 않아 학사자격고시는 폐지되고 교육공무원법도 전면 개정되어 총장, 학장은 문교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조교수 이상의 교직원들은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이 제청하도록 변경되었다.

1960년대 초 대학 교육에 대한 통제 시도는 기본적으로 '조국 근대화'를 국정 지표로 내걸고 강력한 경제 개발 정책을 추구하던 군사 정부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었다. 대학은 기본적으로 창조적인 진리 탐구를 통해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특수한 존재로서, 사회 현실의 모순 구조를 분석 비판하고 보다 나은 사회의 건설을 위한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과제에 부응하여야 한다. 그러나 군사 정부는 대학을 개발 정책에 필요한 고급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 기관으로 육성하고자 하였다. 1960년대에는 이러한 상충되는 두 입장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

먼저 교수와 학생들이 학원의 울타리를 뛰어넘어 사회 현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기 때문에 정부와의 갈등은 불가피하였다. 1964년의 한일 회담 반대 운동, 이른바 6·3 사태와 1969년 3선 개헌 반대 운동 등 주요한 정치적 격변에서 서울대학교는 그 중심에 있었다. 한편 1960년대의 격변의 와중에서 서울대학교는 꾸준한 양적, 질적 성장을 이루어 냈다. 그것은 서울대학교의 교수와 학생들이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학문 연구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과 함께 경제 개발을 위한 고급 인재의 양성을 목표로 한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서울대학교에 집중된 결과였다.

우선 학과와 연구소 등 대학 기구의 개편과 신설이 이루어졌다. 그중에서 이공계 대학이 가장 활발하게 확충되었다. 그것은 이공계 학문 분야가 정부의 경제 개발 전략 곧



공업화를 통한 근대화 추진에 필요한 고급 기술 인력 확보와 직결되는 분야로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집중된 데 기인하였다. 정부는 1965년에 공포한 '대학학생정원령'을 통해 이공계를 중시하는 정원 정책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대학교는 이공계 정원을 중점적으로 늘리게 되었다. 특히 공과대학의 경우에는 새로운 학과가 신설되고 정원이 대폭 증원되었다.

아울러 대학원 교육의 내실화도 이루어졌다. 1960년대 초반까지 서울대학교 대학원 운영은 매우 허술하여 대학원 자체의 교수 정원도 없어 강사로 충원되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대학원은 대학의 의붓자식, 대학의 부속물, 취직 못하는 바보의 집합소로 불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학문 분야가 전문화, 다양화되는 추세와 함께 경제 개발에 필요한 고급 인재의 양성을 위해 대학원에도 여러 학과가 증설되었다. 또한 직업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 대학원도 잇따라 신설되었다.

한편 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본격화되었다. 1962년 미네소타 프로젝트의 중단으로 인해 1960년대 초 서울대학교의 연구 환경은 일시 담보 상태를 면치 못하였으나 자체 학술 연구 활동은 신설되는 연구소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1961년 한국경제연구소(후에 경제연구소)의 설립을 시작으로 연구소 설립이 본격화하여 1961~1965년에 14개, 1966~1970년 5개의 연구소가 창설되었다. 그리고 연구 지원을 위해 서울대학교 예산에 편성되는 학술 연구비와 문교부 예산에 편성되는 학술 연구 조성비 등이 신설되었다. 1967년에는 재단법인 서울대학교 학술재단이 발족되었고 과학기술처의 연구비 지원과 성곡문화재단 등 사회 일부 재단의 연구비 지원도 이루어졌다. 아울러 연구 시설도 확충되어 이공계 대학의 경우 1965년 한일 외교 정상화를 계기로 학과당 10~20만 달러의 청구권 자금의 배정을 받아 실험용 기자재를 보완할 수 있었다. 또한 1969년부터 정부가 주선한 교육 차관도 도입되었다.

대학원과 연구소의 확대, 그리고 연구 기반 시설의 확보 등으로 교수들의 연구 업적은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학술지의 발간 상황을 통해 증명되는데 1960년대에는 학술지 발간에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단과대학 단위의 논문집 및 연구소 중심의 학술지 간행이 성행하였다. 그러나 아직 국제적인 수준의 새로운 연구 성과를 내기에는 서울대학교의 연구 환경은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았다.

1960년대의 급격한 정치·사회적 변화와 내부적 성장의 와중에서도 서울대학교가 지닌 연립대학교의 성격인 각 단과대학별 의식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었다. 이는 개교 이래 오랜 기간 동안 서울대학교가 실질적으로 연립대학교의 성격을 면하지 못한 것

에서 기인한다. 당시 서울대학교는 위치상으로도 동승동 본부, 문리과대학, 의과대학, 법과대학, 약학대학 등은 동승동 인근에 모여 있었으나 사범대학, 상과대학, 공과대학, 농과대학 등은 멀리 떨어진 지역에 각각 분산되어 있었다. 이는 단순히 교육 시설의 지역적 분산이라는 문제에 그치지 않고 학문의 교류와 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되었다. 입학, 졸업, 개교 기념 종합 운동회 때, 그리고 『대학신문』을 받아 볼 때에나 서울대학교가 종합대학교라는 것을 느낀다는 당시의 언급은 이를 잘 보여 준다. 따라서 연립대학교적인 성격을 극복하고 종합대학교의 성격을 강화하기 위한 캠퍼스 재편성 논의가 1950년대 후반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단과대학의 독립성을 극복하고 종합대학교의 성격을 강화하기 위하여 1958년 11월 19일에 서울대학교 종합계획수립위원회가 설치되어 교사 배치에 관한 사항, 시설의 확충·변경 및 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였다. 이 위원회는 당면 목표로서 12개 단과대학의 실태를 파악하는 동시에 건물과 시설 등의 재산 평가에 역점을 두어 활동하였다. 이 활동의 결과로 1960년 6월, 그해를 기점으로 하는 ‘종합7개년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했다. 이 계획의 골격은 여러 지역에 분산된 캠퍼스를 4개의 중심 지역에 집중시켜 연구 분위기를 개선하자는 것이었다. 이 종합7개년계획은 1962년 5월 문교부의 지시에 의하여 ‘종합5개년계획’으로 수정되었다.

종합5개년계획은 1966년까지 동일계(同一系) 대학의 동일지(同一地) 집중이라는 원칙에 따라 교사를 재배치하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는 ① 본부 중심의 인문사회센터 ② 미술대학 중심의 예능센터 ③ 의과대학 중심의 의치약센터 ④ 사범대학 중심의 교육센터 ⑤ 공과대학 중심의 공업센터 ⑥ 농과대학 중심의 농업센터를 조성할 것을 구상하였다. 종합5개년계획은 소요 예산 중 정부가 약속한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았고 중앙공업연구소의 이전이 실현되지 않음으로써 실패하고 말았다. 그리하여 신태환 총장은 1966년부터 1970년까지를 사업 기간으로 해서 서울대학교 캠퍼스를 5개 센터로 통합하고 각 센터별로 동일한 계열의 기구를 종합하는 새로운 종합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신태환 총장의 퇴임과 더불어 이 계획은 다시 ‘종합6개년계획’이라는 새로운 계획으로 변경되었다. 1966년부터 1971년 사이에 서울대학교의 종합화를 실현하려는 종합6개년계획은 1966년 5월에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 종합6개년계획은 음악대학과 치과대학의 이전을 위한 공사가 시작됨으로써 그 실현 단계에 들어서게 된 듯했다. 그러나 종합6개년계획의 실천 과정 중이던 1967년 11월,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에 의하여 ‘서울대학교 종합10개년계획’으로 수정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서울대

학교의 종합화에 매우 적극적이었다. 박 대통령은 서울대학교를 국제 수준의 대학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그 기간을 10개년으로 연장하여 대규모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서울대학교 종합10개년계획의 목표는 대학 본연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과 학술 연구의 진흥을 도모하고 모든 시설을 근대적 시설로 확충하여 세계 일류 수준의 대학으로 육성, 발전시키는 데 있었다. 서울대학교 종합화는 12개 단과대학, 대학원, 6개 전문 대학원의 연합적 기관이었던 서울대학교를 3개의 기초 학문 대학, 12개의 전문 학문 대학, 3개의 전문 대학원으로 재편하여, 교육 기구의 계열화를 이룩하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분산된 캠퍼스를 관악의 메인 캠퍼스, 연건의 의학 캠퍼스, 수원의 농학 캠퍼스로 통합하는 것이었다.

정부는 1968년 7월, '서울대학교시설확충특별회계법' 및 '서울대학교설치령'을 공포하여 전면적인 지원 체제를 정비하였다. 1970년에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서울대학교 종합계획추진위원회가 설치되면서 국가적 차원으로 서울대학교 종합화 계획이 추진되었다. 그리고 1970년 3월에 새 캠퍼스의 통합 이전 부지로 서울과 가깝고 유사시 수도 방위와 학생 지도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서울 근교의 관악산 서북 지역 1백만 평을 공식 선정하였다.

새 캠퍼스 이전에 따라 교육 연구 체제 개편에도 착수하였다. 이에 따라 1975년 2월 '서울대학교설치령중개정령'이 공포되어 종합 캠퍼스 완성에 따른 대폭적인 교육 기구 개편을 단행했다. 기본 학문별 분류에 의한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의 3개 대학과 전문 학문별 분류에 의한 가정대학·경영대학·공과대학·농과대학·법과대학·사범대학·약학대학·의과대학·치과대학·미술대학·음악대학·수의과대학 등 12개 전문 학문 대학이 설치되었다. 이러한 개편은 서울대학교 종합 캠퍼스의 완성에 따라 그 동안 여러 지역에 분산 배치되어 있던 각 대학을 동일한 캠퍼스 내에서 전면적으로 재편성하고 동시에 서울대학교를 구성하는 각 단과대학을 재편성하였다.

교육 및 연구 체계의 정비와 함께 대학 관리 조직의 정비도 이루어졌다. 1975년 이전까지 서울대학교의 제도 및 운영은 소속 각 대학, 대학원, 연구소 등의 하부 기관 중심으로 되어 있어, 대학본부는 이들 여러 기구의 연합체 성격을 갖고 있었다. 심지어 학칙도 대학, 대학원, 전문 대학원 등이 각각 개별적인 학칙을 가져 모두 8개의 학칙이 존재하였다. 1975년 7월, 서울대학교설치령이 개정됨에 따라 8개의 학칙을 폐지하고, 서울대학교 학칙으로 단일화하였다. 이에 따라 과거 단과대학별 학사 행정의 운영은 종합화 이후 대학본부를 중심으로 학과 단위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서울대학교 종합화 계획의 완성은 서울대학교가 세계 수준의 대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합화의 또 다른 의미는 서울대학교가 실질적으로 종합화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제 종합화 계획이 일단락되면서 본격적인 관악 시대의 막이 열리게 되었다. 종합화는 단순히 캠퍼스의 지리적, 공간적 통합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이후 서울대인의 생활과 의식 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였다.

### 3) 대학 종합화와 대학 자율의 진통(1975~1994년)

서울대학교가 관악으로 이전한 1975년에 국내외적으로 많은 사건이 있었다.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의 발발과 저항이 거세어지고 이를 탄압하고자 긴급 조치가 잇따라 발동되어 많은 지식인과 학생이 투옥되거나 해직되었다. 또 1975년 4월 말 베트남이 통일되었다. 유신 정권은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한다는 이유로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긴급 조치 9호를 5월 13일에 발동하는 등 엄중한 시국 상황이 계속되었다. 학생 활동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결국 6월에 학생회 폐지와 준전시적 조직인 학도호국단의 부활로 가시화되었다.

1970년대 후반 어수선한 시국 상황에서 새로운 종합 캠퍼스에서 대학을 다닌 세대는 이전과 다른 행동과 의식을 갖게 되었다. 이들을 ‘관악 세대’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관악 세대’라는 명칭은 1975년 이후 격렬한 사회적, 정치적 변동을 통한 한국 사회의 갈등을 체험하면서 성장한 서울대생이라는 의미를 포함한다. ‘관악 세대’는 이전의 가족주의적 분위기를 가진 단과대학별 전통과는 단절되었지만 대신 단일한 캠퍼스를 배경으로 집단적 의식과 개인주의적 의식이 혼재한 세대였다. 이는 1980년대 대규모 학생 활동의 한 배경이 되었다.

학원을 중심으로 한 정권에 대한 저항과 정부의 대학에 대한 통제 정책이 계속되는 어수선한 상황에서 서울대학교 교육 체계 전반에 대한 변화 시도는 지속되었다. 1970년대 들어서면서 정부는 고등 교육 체계의 변화를 시도하였다. 1960년대에 정부가 추진한 일련의 대학 정비 시책은 지나치게 급격한 변화를 야기하였고, 정부의 주도 아래 추진된 것이어서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정부는 1960년대 말부터 대학의 참여에 의한 점진적 개혁으로 정책 방향을 수정하고 1971년부터 본격적인 대학 교육 개혁 사업을 추진하였다. 대학 교육 개혁 사업에 서울대학교가 실질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은 1974년부터 착수한 ‘실험 대학’의 운영이었다. 실험 대학은 ‘점진적 접근 방법’에 의한 대학 개혁의 선도적 시범 대학’이라는 의미와 여건을 갖춘 대학이 대학 교육 개혁을 위해 대학의 운영을 실험적으로 시행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실험 대학을 통한 개혁으로 1973년에 내세운 제1차 개혁 과제는 다음 세 가지였다. 먼저 졸업에 필요한 총 학점을 160학점에서 140학점으로 감축함으로써 지나치게 세분화된 교육 내용을 시정하고 수업 과목 간의 중복된 교육 내용을 정리 통합할 것, 둘째, 학과별 정원제를 대학별·계열별 정원제로 전환하여 입학생의 모집 방식을 학과에서 계열별로 변경할 것, 셋째, 부전공제의 도입이었다. 이는 학문 상호간의 관련성이 증대하는 현실과 변모하는 사회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학생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학과 중심의 교육 과정 운영에 대변혁을 초래할 수 있었다.

이상의 세 항목이 1973년부터 우선적으로 추진되었고, 1975년부터는 ‘졸업 제도의 종합적 개선 사업’에 따라 학업 성취 능력에 따른 학점 초과·제한 취득, 특별 시험제, 복수 전공제, 계절 학기제 등이 의욕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실험 대학 방식의 대학 개편은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못하였다. 먼저 계열별 모집은 계열 구분에서 ‘학문 계열에 따른 대계열 구분법’을 따랐기 때문에 계획 당시부터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특히 학과 배정 결과 일부 학과에 지원 학생이 몰리는 등의 교육적인 문제가 계속 발생하였다. 부전공 제도도 시행 이래 끊임없는 제도 보완이 있었지만 안정적으로 정착하지 못했다. 또한 실험 대학이 대학 교육 체계 전반에 걸쳐 변화를 가져왔으나 기본적으로 학부 교육 측면에 치중하였고 연구의 측면에는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였다. 더욱이 교수진에게 교육 과정 운영에 큰 부담을 주었으므로 상대적으로 대학의 연구 기능은 저하될 가능성이 컸다.

이에 서울대학교는 1977년 학사과정 중심 대학에서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 개편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발전10개년계획’의 수립에 착수하여 1979년 4월에 발표하였다. 기획 위원회에서 마련한 이 계획안은 대학 발전의 기본 목표를 ‘학문의 대학’, ‘민족의 대학’, ‘세계의 대학’으로 설정하였다. 계획안은 서울대학교를 학사과정 중심 대학에서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 전환시킬 것을 주요 내용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대학원과정에서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연계 운영, 학사과정의 집중 분야제 채택, 연구소의 종합 운영 등의 세부 운영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계획은 교육의 중점을 대학원과정에 두고 학사과정과 대학원과정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였다. 대학원의 교과 과정(석·박사)을 먼저 편성하고, 이와 연계 하에

학사과정의 교과 과정을 편성하였다. 집중 분야제는 하나의 특정 학문 분야를 집중 분야로 하여 그것과 관련된 분야의 교과목을 광범하게 이수토록 하는 것이었다. 즉 종래의 학과별 전공제에서 탈피하여, 학부에서는 기본 학문에 충실케 하는 한편, 대학원과정에서 전공 교과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었다. 또한 대학원생은 교육 과정의 한 부분으로서 연구소의 연구 활동에 참여토록 하였다. 또한 대학원에는 학문적 필요에 따라 관련 학문 사이의 ‘협동 학위 과정’을 설치하고 연구소를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서울대학교 개교 이래 최초로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 개편을 시도한 이 서울대학교 발전10개년계획은 계획으로서 확정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시안으로서의 성격이 강하였다. 그러나 그 이전까지 학부 강의를 중심으로 한 대학 체제에서 이제 새로운 지식을 연구하고 이를 통해 학문 연구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연구 중심 대학으로 전환을 선언하였다는 점에서 이후 서울대학교 발전에 큰 시금석이 되었다.

서울대학교 발전10개년계획이 구체화되지 못한 가운데 10·26 사태가 발생하면서 대학은 커다란 정치 변동에 휩싸이게 되었다. 대학 개혁의 자율적 논의를 봉쇄했던 유신체제가 붕괴함에 따라 서울대학교에서는 자율적으로 대학 체제의 개편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를 수렴할 기구로서 1979년 12월 학사조정위원회가 총장의 비상설 자문 기관으로 설치되었다. 그러나 서울대학교 측의 자율적인 대학 개혁 논의는 1980년 5·17 쿠데타를 계기로 향후 대학 변화에 반영되지 못하였다. 그 이후 대학 발전 계획은 정부의 7·30 교육개혁조치에 따른 졸업 정원제의 실시 등으로 인해 그 좌표를 상실하게 되었다.

1970년대 초반의 종합화 계획 및 1970년대에 제시된 대학원 교육 강화 방안의 공통점은 “학부 정원은 현 수준에서 동결하고 대학원 정원은 점차 늘려서 이를 통해 연구 중심 대학으로의 전환을 꾀하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1980년 7·30 교육개혁조치로 인해 이와 같은 기본 전제가 무너졌다. 5·17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신군부는 이어 7월 30일 초법적 기구인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교육정상화및과열과외해소방안’, 이른바 7·30 교육개혁조치를 발표하였다.

7·30 교육개혁조치의 주요 내용 중 대학 교육과 관련된 것으로는 대입 본고사의 폐지, 졸업 정원제의 실시, 대학 정원의 증원, 교육 대학의 수업 연한 연장, 방송통신대학의 확충 등이었다. 특히 대입 본고사의 폐지와 내신 성적의 반영, 졸업 정원제, 전일제(全日制) 수업 실시, 대학 정원의 확대 등은 대학의 전면적인 변화를 야기하는 것이었

다. 이 조치는 기본적으로 대학의 학부 정원 증원이 핵심 내용으로 1950년대 후반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의 대학 진학으로 인해 대학 진학 희망자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나타난 국민의 고등 교육 확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아울러 1970년대 급격한 산업화의 진행으로 인한 산업계의 고등 교육 인재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었다. 이 조치로 인해 한국의 고등 교육 인구의 급격한 양적 확대가 이루어져 이른바 고등 교육의 대중화 단계로 접어들게 되었다. 그러나 이 조치에 의해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던 서울대학교의 장기적 발전 전망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7·30 교육개혁조치로 인해 서울대학교에는 적잖은 변화가 나타났다. 먼저 대학 인구의 급격한 증가를 들 수 있다. 학생 인구는 1975년 16,146명에서 1985년 30,356명으로 10년 사이에 거의 두 배로 증가하였다. 이는 졸업 정원제 실시로 인한 것으로 졸업 정원제는 졸업 정원의 대폭적인 확대, 졸업 정원의 130%를 입학 정원으로 삼는 것과 대학 재학 시에 졸업 정원을 초과하는 학생을 감원하는 것이었다. 졸업 정원제 실시로 인한 대학 정원 증원 정책으로 서울대학교는 기존 정원의 96.9%를 증원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대입 본고사가 폐지되고 계열별 모집에서 소계열, 학과별 모집으로 변경되었다.

대학 정원의 급격한 확대는 적잖은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1980년 공과대학의 관악 캠퍼스 이전에 이은 졸업 정원제의 실시로 관악 캠퍼스의 대학 인구를 팽창시켰고, 이에 따른 시설 확충이 충분치 못하여 대학의 과밀화가 심각하게 진행되었다. 이는 강의 실 및 실험 실습실 부족, 대단위 수업으로 인한 강의의 질적 저하, 교수 인력 부족, 연구 기능 약화 등 교육 여건 전반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학생의 경우 과외 금지로 지방 학생들의 경제 사정이 어려워졌고 동시에 대학 인구 증가로 이전의 엘리트주의적 의식 세계에 변화를 가져왔다. 1980년대 학생 문화가 보다 서민적이고 소박해지고 집체적인 양상을 띠게 된 것은 이러한 상황의 반영이었다.

7·30 교육개혁조치 실시에 따라 나타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대학교는 학교의 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구상하고, 연구 여건을 개선하며, 시설 및 인력 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먼저 1983년 12월, 1970년대 후반의 대학 발전 방향을 재확인하는 새로운 발전 계획으로 '서울대학교 발전10개년계획'이 구상되었다. 구체적으로 학생 정원을 1983년 수준으로 억제하고 대학 인구에 맞추어 대학 시설의 확충과 교수 증원을 도모하였다. 이를 통해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의 지향을 모색하였다. 이 계획안은 제대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산되었다. 그러나 이는 1987년 '서울대학교 발전장기계획'으로 일부 계승되었다. 다음으로 연구 여건 강화를 위해 1987년 연

구치가 신설되고 교수와 조교의 대폭적인 증원이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학생 활동 지원을 위한 기숙사 증설, 강의동 신축, 후생 복지 시설 건설 등이 이루어졌다.

1987년 6월, 전 국민적인 민주화 운동 이끈바 '6·10 민주 항쟁'으로 한국 사회의 민주화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추세로 변하였다. 사회 민주화의 분위기는 학원의 자율화로 이어졌다. 1984년 2학기에 학생들이 직선으로 총학생회를 출범시킨 이후 학생들의 사회 참여는 한층 고조되었고, 학생들은 6월 민주 항쟁의 한 축이 되었다. 또 1988년 10 월에는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학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움직임이 확산되었다. 이와 함께 1988년에는 대학원생들도 대학원자치회를 각 대학원별로 구성하여 대학원생의 연구 여건 개선 및 자유로운 연구 풍토 조성을 위한 작업을 추진 하였다. 한편 교수들도 1987년 9월에 교수협의회 총회를 열고 학내의 민주적 운영을 지향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교수협의회는 학원 자율화에 걸 맞는 새로운 학칙 개정과 교육 관계법 개정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하였다. 교수협의회는 1989년 3월에 「총장 선출 방법안」을 제출하여 1991년 8월에 첫 직선제 총장으로 김종운 교수를 선출하여 대학 자율화를 진전시키는 데 역할을 하였다.

대학 자율화의 진전과 함께 서울대학교는 1987년 '서울대학교 발전장기계획'을 완성 하였다. 이 계획은 1987~2001년까지 15년 동안 서울대학교를 '국제 수준의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 발전시킨다는 목표 아래 대학 조직의 개편, 학사 제도의 개선, 대학 행정 재정의 효율화, 캠퍼스의 합리화 등을 골격으로 마련된 마스터플랜이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대학 조직의 개편과 관련된 내용으로 주로 연구 중심 대학, 또는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의 개편을 지향하였다. 이에 따라 학사과정 학생의 입학 정원을 감축하는 대신 대학원 정원을 증원하도록 하였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교수의 정원을 늘리고 교수의 연구 여건 개선, 조교의 증원, 학부제 실시, 연구소 및 연구 지원 시설의 확충 및 개선 등을 목표하였다. 특히 학문적 연관성이 높은 학과들을 2~4개씩 묶어 각 대학에 4~6개 씩의 학부(division)를 설치하도록 한 것은 이후 대학 개혁의 움직임과 맞물려 적잖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음으로 연구 관련 학사 제도의 개선으로 주로 교수들의 연구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 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교수의 과중한 수업 부담을 줄이고 연구비를 증액하며 연구 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연구년제를 실시할 것을 주요 골자로 하였다. 대학원과정 학사 제 도의 개선에서는 대학원생들의 생계를 일정 부분 보장하여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조건



을 보장할 것을 계획하였다. 대학 행정 재정의 효율화를 위해 학부 및 단과대학으로 행정을 효율적으로 분산시키는 방안과 함께 대학 행정직의 신설을 계획하였다. 그리고 발전장기계획의 예산 문제에 대해 '서울대학교법' 과 정부의 지원, 그리고 발전 기금의 모금 등을 고려하였다.

마지막으로 캠퍼스 합리화 분야에서는 2000년대 대학원 중심 대학이 요구하는 추가적인 교육 연구 및 지원 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한 추가 교지의 확보 및 합리적인 교지 이용을 위한 캠퍼스 재배치 계획을 강구하였다. 덧붙여 수원 농과대학 캠퍼스를 이전하는 방안도 고려하였다.

서울대학교 발전장기계획은 이후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친 결과들과 상황 변화 등으로 인해 몇 차례 수정 작업이 계속되었지만 2000년대 세계의 대학으로 도약하려는 서울대학교에게 이 계획은 매우 고무적인 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실제 1990년대 전반기에 있었던 주요한 몇 가지 변화는 기본적으로 발전장기계획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대표적으로 1990년에 '재단법인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을 설립하여 발전 계획을 수행하고 연구 중심 대학으로 전환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 문제를 해결하였다. 또한 1989년 대학 내부에 캠퍼스 전산망이 설치되어 모든 캠퍼스가 전산망에 의해 연결되었으며 해외의 학술 정보를 서울대학교 전산망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전산화 체계의 수립으로 인해 중앙도서관에도 변화가 나타나 장서에 바코드를 부착하여 도서 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졌고 서울대학교설치령 개정으로 도서관의 위상이 격상되었다. 또한 규장각이 도서관에서 분리되어 국학 연구 진흥의 중요 기반이 되었다. 1980년대 말부터 세계 수준의 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해 해외 유수의 대학과 교류를 맺기 시작하여 여러 대학과 학술 교류 협정을 맺었다.

#### 4) 지식 기반 사회로의 전환과 연구 중심 대학의 모색(1994~2006년)

1990년에 들어서면서 학내외 상황은 큰 변화를 맞이하였다. 1987년 6·10 민주 항쟁을 계기로 국내적으로 사회의 민주화와 자유의 신장은 괄목할 만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고, 사회 전반의 개혁 요구와 다양한 의견 개진이 봇물을 이루었다. 학내 자율화의 신장과 민주적 의사 결정의 모색이 이를 반영한다. 사회 민주화에 중점이 두어졌던 학내 성원의 움직임은 점차 학원 자율화와 새로운 대안의 모색에 나서게 되었다. 이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전의 산업화 사회에서 지식 기반 사회로의 전환이 바로 그것이다.

자본과 노동이 생산 요소의 핵심을 이루었던 산업 사회에 비해 지식 기반 사회는 지식이 가장 큰 생산 요소이다. 여기서 지식이란 단순히 무엇에 대한 앎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창출할 수 있는 기술과 정보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특히 인터넷의 보급으로 인하여 이전의 고급 지식도 급속히 대중화됨에 따라 기존 지식의 기득권마저도 붕괴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지식의 보급이 아닌 새로운 지식의 창출이 매우 중요한 시대적 과제로 부과되었다. 대학 교육도 이에 부응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연구 중심 대학의 모색은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대한 대응이었다. 이를 위해 연구 환경의 마련이 시급한 일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까지 서울대학교의 연구 환경은 아직 열악한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였다.

1980년의 7·30 교육개혁조치로 인해 대학생의 입학 정원 증가와 교수들의 교육 부담 가중, 그리고 학내 캠퍼스의 부족 등의 문제는 1990년대 들어서도 완전히 극복되지 못하였다. 서울대학교는 1987년의 '서울대학교 발전장기계획'에 따라 그해 7월 1일 국내 대학 최초로 연구처를 출범시켰고, 연구 진흥, 연구 지원, 연구 관리 및 연구 평가에 관한 업무가 시작되면서 1980년대 후반부터 연구 제도의 정비 및 연구비 증가 등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본격적인 연구 중심 대학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연구 환경의 정비는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었다. 실제 1995년을 전후하여 교수 처우 문제, 학문 후속 세대의 육성 문제, 열악한 연구 환경, 연구비의 부족, 대학 재정의 부족에 대한 인식과 논란이 교내에서 매우 진지하게 논의되었다. 외국 대학과 연구 환경을 비교하며 서울대학교가 세계 800위권의 대학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타난 것도 이때의 사정을 반영한다.

교육 및 연구 환경의 정비는 먼저 강의실, 연구소, 기타 후생 시설의 대폭적인 신설로 구체화되었다. 단과대학 건물로는 경영대학, 법과대학, 사회과학대학, 공과대학, 농과대학이 신축 건물로 이전하여 강의실 및 연구실의 공간 부족을 완화하였다. 그리고 이공 계열을 중심으로 다수의 연구소 건물이 대기업이나 정부 기관의 투자로 신축되었다. 2006년 현재, 약 200개의 관악 캠퍼스 건물 중 1990년대에 신축된 건물이 95개인데, 그 가운데 43개의 건물이 2000년 이후에 신축되었다.

특히 연구 활동의 진작을 위한 '산학연 협동 연구 단지' 조성의 필요성이 인식되면서 1991년부터 서울대학교 연구공원 조성이 논의되어 1994년 본격 착수되었다. 연구공원

의 조성은 이전의 연구와는 또 다른 차원의 연구가 진행됨을 의미한다. 즉 이전의 연구는 주로 학교 연구실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규모가 영세하였고, 실용성보다 이론적 측면의 연구가 다수를 이루었다. 그러나 산학연 협동 연구 단지인 연구공원의 조성으로 인해 산학 협동의 실용적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대학의 연구 역량이 상업화된 연구에 집중됨에 따라 이른바 ‘학문의 상품화’를 크게 재촉할 우려가 있었고, 이는 기초 학문의 위축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연구 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시설의 대폭적인 신설과 함께 교내의 정보화도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1990년대 초에 컴퓨터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으로 캠퍼스 전산망이 1990년 개통되었고 1992년에는 국내 대학들을 하나의 전산망으로 연결하는 교육 전산망을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아울러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통해 학내외 정보 교류와 교내 교육 학술 및 행정의 전산화가 가능해졌다. 정보화의 급속한 진전은 학생 사이의 정보 통신 문화의 확산을 가져왔다. 또한 학생들의 수업 이외 생활이 인터넷 공간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각종 서클 등 이전의 ‘집단 문화’가 약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학내 자율화의 신장과 연구 중심 대학으로의 전환과 함께 대학 운영에서도 적잖은 변화가 나타났다. 1980년대까지 한국의 고등 교육은 교육 당국의 관료적 영향력이 매우 컸다. 따라서 교육 기관의 설립과 운영이 국가의 직접적인 규제를 받게 되고 교육 기관에 대한 국가 감독권과 통제권도 확립되었다. 그러나 1987년 이후 사회 민주화의 진행에 따라 대학 자율화가 확대되면서 교육에 대한 정부 주도의 규제 완화 정책이 본격 시행되었다. 특히 1993년 문민 정부의 출범과 함께 개방화와 세계화의 물결이 거세게 몰아치면서 1990년대 전반은 교육 개방과 세계화에 따른 국가 경쟁력 향상이 정책적 관심이 되었다. 1995년 5월 31일에 교육개혁위원회가 발표한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 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 개혁 방안’에서는 신교육 체제의 기본 특징으로 학습자 중심 교육, 개별 학교의 자율과 책무성에 바탕을 둔 학교 운영, 교육의 다양화, 정보화 등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1990년대 중반 이후 고등 교육 정책은 고등 교육의 보편화 기초 속에서 고등 교육의 질을 관리한다는 명분으로 평가를 통한 대학 경쟁력 강화가 강조되었다. 교육 당국은 일부 경쟁력 있는 대학들을 연구 중심-대학원 중심 대학으로 지정하여 재정적으로 집중 지원하는 정책을 제시하였다.

서울대학교는 변화하는 주변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였다. 1995년 1월에 발표된

‘서울대학교 2000년대 미래상’은 세계적 수준의 대학원 중심 대학을 지향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대학교 특별법의 추진과 학교 운영의 자율성 확보, 단과대학 중심의 대학 운영, 그리고 학부 대학의 설치 등을 제시하였다. 그해 교육개혁위원회의 ‘5·31 교육개혁방안’이 발표되면서 서울대학교의 발전장기계획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서울대학교는 학부제와 대학원 중심 대학이라는 교육부의 대학 교육 개혁안에 보조를 맞추면서 이러한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서울대학교의 발전에 추진력을 받고자 하였다. 1995년 초부터 추진된 ‘서울대학교법’의 제정이 그것이다.

서울대학교법은 1987년에 입안된 서울대학교 발전장기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이 법의 제정은 서울대학교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교육부 장관 직속으로 되어 있는 행정 체계를 국무총리 직속으로 격상하여 학교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고 학교 발전의 자율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였다. 서울대학교법에 대한 논의는 1995년 3월 이수성 총장이 취임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어 4월 12일 ‘서울대학교법 제정을 위한 기획과제 연구진’이 위촉되어 이듬해 3월에 ‘서울대학교법(안)’이 완성되었다.

이 법안의 기본적인 내용은 먼저 서울대학교의 법적 위상을 국무총리 관할 아래 둠으로써 학교 행정의 효율화를 국가 차원의 지원을 통해 확보하는 것이었다. 다음으로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 교육 조직을 개편하고 이를 위해 학사과정 교육은 신설될 ‘학사교육원’을 통해 하도록 하였다. 셋째,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 전환하기 위한 연구 교육 지원 제도의 정비로 학술정보원, 민족문화원, 국제교류센터, 입학관리센터 등의 신설 및 언어교육원 개편을 제안하였다. 이 외에도 학사 행정 기구 개편, 특별 회계법의 마련 등을 제시하였다.

법안이 마련된 이후 서울대학교법을 본격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여론 수렴 과정에서 다양한 주장이 제시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5월 말 수정안을 마련하였다. 그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매우 격렬한 논의가 있었다. 서울대학교의 학문 수준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학문 후속 세대의 양성을 위해 이 법의 제정을 적극 찬성하는 견해부터 국립대법으로 확대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타났다. 극단적인 의견으로는 ‘서울대 폐교론’, ‘서울대 공해론’, ‘서울대 망국론’ 등의 주장까지 나타나기에 이르렀다. 그 주요 내용은 서울대학교가 한국 사회의 주요 부분을 장악하면서 학연주의와 학벌주의 등으로 사회에 피해를 입히는 만큼 서울대학교를 폐지하고 대학원 대학으로 만들거나 지방의 다른 국립대학교를 함께 육성하라는 것 등이었다. 서울대학교법은 결국 학내외의 발발로 인해 그해 말 법제화에는 실패하게 된다.

1990년대 전반기부터 연구 중심 대학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설과 운영 체계의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1990년대 중반 서울대학교의 교육 및 연구 환경에는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먼저 학부의 정원이 줄어들고 대학원 정원이 늘어나서 대학원의 양적 증가가 두드러졌다. 아울러 연구처 중심의 연구비 중앙 관리 제도가 정착되면서 연구비 지원 체계가 정비되고 외부에서 대규모 연구비가 지원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교내의 연구 활동은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이는 교수의 업적 증가로 나타났다. 그러나 응용 학문 중심으로 연구비가 집중됨에 따라 학내 갈등의 표출과 기초 학문의 위기 심화 등이 제기되었다.

다음으로 1994년 자연과학대학을 시작으로 학부제가 도입되면서 학생 생활 전반에 변화가 나타났다. 학부를 중심으로 학생 생활이 이루어지면서 학생 상호 간의 긴밀한 관계를 이전처럼 유지할 수 없었다. 이는 동시에 학생 운동 퇴조의 한 원인이 되었다. 물론 학생 운동의 퇴조는 그 이전 정치적인 억압 상황에서 정치, 사회 문제를 이슈로 하였던 학생 운동이 사회 민주화와 다원화의 진전에 따라 전반적인 침체의 길을 걷게 되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 물질 만능주의, 상업주의가 판치는 사회 현상이 대학에 침투하였음을 보여 준다.

또 연구 중심 교육 기관으로 서울대학교가 변화하면서 캠퍼스의 24시간 개방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제 학교는 단순히 수업만 듣고 연구하는 공간이 아닌 생활공간의 역할도 수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캠퍼스 확충 및 재편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 과정에서 관악 캠퍼스 일대의 자연 환경 훼손과 관련하여 인근 지역 주민과 갈등이 나타났다. 원래 관악 캠퍼스는 2만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건설되고 캠퍼스 주요 시설을 중앙의 약 30만 평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주변에 녹지 등을 두어 인근 지역과 분리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캠퍼스의 확충은 자연스럽게 주변 녹지의 훼손을 가져왔다. 특히 여러 연구 시설을 충분한 사전 계획에 의해 건설한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건립하면서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친환경적 캠퍼스의 추구는 이러한 변화된 상황을 반영한다.

1997년 말 외환위기는 사회 전반적인 변화와 함께 대학 사회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구조 개혁은 대학의 위상과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에서 무한 경쟁을 통한 효율성의 극대화를 우선하는 이 이념의 확산으로 대학 사회에서는 경쟁 개념이 적극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연구 분야에서도 경쟁의

논리가 지배하기 시작하였다. 이른바 선택과 집중 방식의 연구 지원이 그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두뇌한국21(BK21)’ 사업을 들 수 있다. 정부는 2003년까지 세계적 수준의 소수의 ‘연구 중심 대학원 중심 대학’을 육성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소수의 선도 대학원을 선정하며, 국가 경쟁력에 직결되고 국제적 비교 우위 확보가 가능한 기초과학 및 첨단 공학 등을 핵심 육성 분야로 선정해서 그 분야에 대규모 연구 사업단을 구성하여 집중 지원하도록 구상하였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시행된 두뇌한국21 사업은 연구 중심 대학 육성을 위한 대학 구조 조정을 조건으로 연구비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이에 정보 기술과 생명 공학 부문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되고 인문학, 사회 과학, 자연 과학 등 기초 학문에 대한 지원은 약화되었다. 두뇌한국21 사업은 기존의 균등 지원을 버리고 이른바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소수 대학 특정 분야로 지원을 집중하였다.

대학의 경쟁 체제 도입과 함께 이른바 대학의 구조 조정이 본격화되었다. 교육부는 2000년 12월 ‘국립대학 발전 계획안’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공공 부문 개혁의 일환으로 국립대학의 구조 조정을 추진한 것이다. 이 방안은 국립대학의 역할 설정을 통해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역할을 분담하고자 한 것으로 국립대학의 역할을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분야의 인적 자원 개발과 학문의 균형 발전을 위한 기초, 보호 학문 분야 육성 등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대학 운영 시스템을 자율과 책무에 기반을 두도록 하여 대학 운영의 자율성 강화를 표방하였다. 국립대학의 질 관리 체제 확립을 위해 교육 및 연구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교수 계약 임용제 도입과 교수 연봉제 도입, 우수 교수 인센티브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국립대학 발전 계획안은 실행 과정에서 이견과 갈등이 노출되어 그대로 시행되지는 못하였지만 이후 국립대학교 개편의 중요한 논점을 제시하였다.

서울대학교는 외환위기 속에서 자체적인 구조 개혁을 꾸준히 실행하였다. 1998년 2월 서울대학교 발전자문위원회에서 작성 발표한 ‘서울대학교 장기발전구상’은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이 구상의 주요 내용은 서울대학교를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04년까지 대학 입학 정원을 4,910명에서 3,260명 선으로 감축하고 기초교육원을 설립하도록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기초 교육의 내실을 다지고 2008년 이후에는 기초교육원을 학부 대학으로 전환하고 치의학, 법학, 의학, 경영, 건축 등 전문 대학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구상하였다.

1990년대 이후 연구 중심 대학으로의 자체 개편과 두뇌한국21 사업과 같은 정부의 대규모 연구 지원에 힘입어 2000년대 들어 이공계 분야를 중심으로 교내의 연구 실적은 이전 시기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는 SCI(과학기술논문색인) 논문 게재 수의 급증

과 세계적 연구 발표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학의 국제 경쟁력 순위 역시 급상승하게 된다. 2005년 10월 영국의 『더 타임즈』 조사에 따르면 서울대학교가 세계 대학 순위에서 93위권으로 급상승하였다. 그러나 이공계 분야를 중심으로 한 집중 지원은 상대적으로 기초 학문 분야나 실수요자 층이 적은 학문 분야의 위축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즉 시장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이공계 분야나 졸업 이후의 취업 전망과 관련해 중요성을 지닌 분야는 크게 발전할 수 있으나 기초 학문 분야와 실수요자 층이 적은 학문 분야는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실제 연구 중심 대학으로의 전환과 두뇌한국21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많은 학문 분야의 대학원 진학률은 오히려 저조해지고 대학원 연구자들의 연구 역량이 각종 사업 참여로 인해 감소하는 아이러니를 낳게 되었다. 2000년도 이후 대학원 입학 경쟁률은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미충원을 역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쟁률 감소는 경쟁력 감소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연구 능력이나 연구 의지가 높은 인재들이 국내 대학원보다는 여건이 좋은 해외 대학원으로 진학하고 이들이 국내 대학에 들어와 학생을 키우는 악순환이 나타나게 된다. 최근 서울대학교 교수 중 외국 대학 출신자가 다수를 점하고 있다는 자료는 이러한 현상에 대한 반성적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학생 사회의 변화도 적지 않았다. 졸업 이후의 진로가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학생들은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입학 초기부터 안정적인 직업 선택을 위하여 노력하게 되었다. 최근의 고시 열풍과 이른바 비인기 학과의 학생 감소 현상은 그러한 현상의 한 반영이다. 또한 개인주의적 성향의 증가로 인하여 학생 활동에 대한 무관심이 높아져 총학생회 선거마저도 학생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최근 총학생회의 파행적 운영은 총학생회를 책임질 만한 능력과 비전을 가지지 못한 후보자가 자극적인 이슈를 통해 당선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아울러 교수와 학생의 관계도 이전보다 소원해지고 있다. 이는 대학원 중심의 연구 활동에 교수의 역량이 집중되면서 학부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는 소홀해진 것과 관련이 있다.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한 대학의 구조 조정이 일단락되자 2003년 서울대학교는 새로운 ‘서울대학교 장기발전계획’을 발표하였다. 1987년의 발전장기계획이 서울대학교를 연구 중심 대학으로 발전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대 상황의 변화에 따라 기본 발전 방향을 재고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따라서 ‘세계 수준의 종합 연구 대학’을 목표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 간의 장기발전계획을 제시하게 되었다. 이 계획의 특징은 서울대학교의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한 것과 운영 체계를 정립하려 한

것에 있다. 따라서 대학의 자치와 자율성 원칙 아래 대학 운영 전반의 자율권을 확보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는 정보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인해 지식의 대량 유통 및 소비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지식의 창출이 요구되는 지식 기반 사회로의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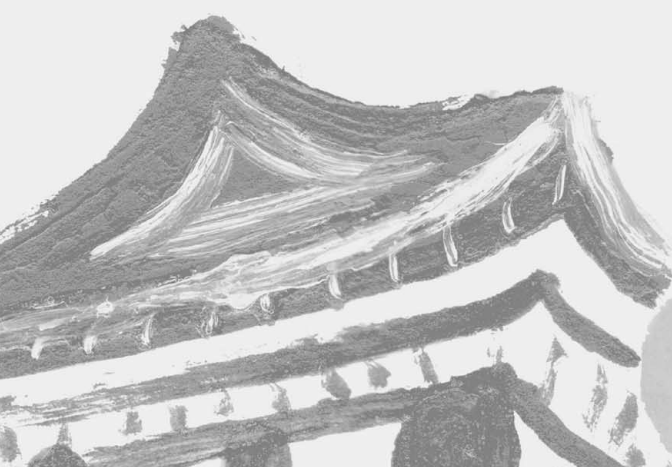
대학의 자율성 확보 요구에 대해 교육 당국은 국립대학 법인화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립대학 법인화는 연구 및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국립대학을 특수 법인화하는 방안이다. 법인화의 도입 취지는 변화하는 교육, 연구 환경 속에서 대학의 자율성 확보를 통해 대학의 책임 경영제를 구축하여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 있는 대학을 육성하고 지역 발전 및 문화 거점으로 특성화할 수 있는 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국립대학 법인화는 1987년 교육개혁심의회 '교육 개혁 종합 구상' 보고서에서 처음 제시되었고 1995년 5·31 교육개혁방안에서 확인되었다. 특히 2003년 일본에서 국립대학 법인화 법안이 통과된 것을 계기로 2004년부터 교육 당국에 의해 검토되기 시작하여 최근까지 많은 논란이 있었다.

국립대학 법인화는 대학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학 운영의 자율성 및 융통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 방안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교육 정상화의 측면에서 문제점이 적지 않다. 즉 대학의 재정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아직 미흡하고 학문의 상업화로 인한 기초 학문의 고사 우려가 남아 있다. 아울러 공무원 신분으로 안정성이 유지되던 국립대학 교원의 고용 불안정성이 증가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보다 안정적인 교육과 연구 대신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연구에 몰두하게 되어 대학의 자율적 연구가 침해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있다. 서울대학교 법인화에 대한 교육 당국의 적극적인 모색에 대해 2005년 중반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 등에서는 대학의 재정 안정 및 자율성 훼손의 측면에서 비판적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서울대학교의 향후 발전방향과 관련하여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활발한 학내 토론이 필요할 것이고, 학내 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는 장기 발전계획 속에서 결국 법인화 문제도 해결해야 할 것이다.





제 1 부  
공간





## 제1장 캠퍼스의 변천

### 제1 절 초창기의 캠퍼스

#### 1) 기억의 공간

2006년 봄. 서울대학교 동승동 캠퍼스가 위치하였던 자리엔 현재 마로니에 공원이 들어서 있다. 공원 한편의 야외 무대에선 사람들이 아마추어 연기자의 공연을 보기 위해 잠시 지나던 발걸음을 멈춘 채 동그랗게 한 무리를 만들어 서 있고, 마로니에 나무 주변 벤치들에선 가족이나 연인들이 사진을 찍거나 이야기를 나누며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문화 예술의 거리 대학로의 대표적 상징 공간으로 자리 잡은 이곳은 이처럼 여유를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로 항상 붐빈다.

공원 광장의 한가운데에는 마로니에 나무들을 벗하여 '서울대학교 유지 기념비(遺趾記念碑)'가 세워져 있다. 이 기념비는 옛 동승동 캠퍼스를 실물 크기의 백분의 일로 축소한 것으로 주택공사가 1,600만 원을 들여 2개월 만에 완공, 1976년 12월 16일에 서울대학교 동창들과 관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막식을 치렀다.

동승동 캠퍼스는 이처럼 하나의 기념비가 되어 사람들의 기억 속 공간으로 옮겨져 있



그림 1-1-1 1976년 12월 16일, 마로니에 공원에 세운 '서울대학교 유지 기념비'

다. 캠퍼스의 상징과도 같았던 마로니에 나무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휴식의 터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 그늘에서 휴식하는 사람들 중 서울대학교를 떠올리는 사람은 이제 그리 많지 않다. 공원 한편에는 옛 서울대학교 본관 건물이 과거 모습 그대로 남아 있지만,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건물의 새 주인이 된 지 이미 오래

다. 공간은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었으며, 사람들은 이 공간 속에서 새로운 의미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

1973년 가을, 은행나무 단풍의 아름다움이 절정에 다다른 문리과대학 교정에는 머지않아 폐쇄될 캠퍼스의 모습을 간직해 두고자 매일 2백여 명의 학생들과 교수, 졸업생들이 몰려 와 사진을 찍으며 저마다의 추억을 담았다. 관악 캠퍼스로의 이전과 함께 이 정든 교정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것이란 이야기는 기정사실이 되어 갔다. 공과대학과 상과대학 등 다른 단과대학의 학생들은 물론, 졸업생들도 재학생들의 권유로 일부러 틈을 내어 사진을 찍고 갈 정도였다고 하니, 한창 건설 중이던 관악 캠퍼스의 장대한 청사진도 그들이 자신들의 공간에 가졌던 애착까지 어찌하지는 못하였던 듯하다.

문리과대학 교정이 자리한 서울대학교 동숭동 캠퍼스 주변에는 이처럼 사진으로나마 남겨 두고자 했던 명소가 몇몇 있었다. 언제부터인지 확실치 않지만 학생들은 꽤 오래 전부터 대학본부 및 문리과대학 앞의 대학천(大學川)을 '세느 강'이라 부르고, 그 위 다리를 '미라보 다리'라 불렀다. 맨 처음 이름을 붙인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한날



그림 1-1-2 대학천 '세느 강'과 '미라보 다리'

콘크리트 다리에 지나지 않는 다리를 '미라보 다리'라고 즐겨 부른 것은 대학인만이 가지는 독특한 낭만 기질이였다. 그렇지만 그 주위 경치는 '미라보 다리'라는 명칭만큼이나 낭만적이고 대학인들이 잊지 못하는 명소였다. 봄이면 개나리가 강변을 따라 줄지어 피는 것이나, 가을이면 교정의 은행잎이 강가를

장식하는 모습은 정말 ‘세느 강’을 연상케 하였다. 그러나 그 ‘세느 강’은 상송의 멜로디처럼 낭만만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시위가 한창일 때 ‘세느 강’은 최루탄과 돌이 오가던 곳이기도 했다.

대학천을 옆에 두고 법과대학 정문 앞에서부터 문리과대학 후문에 이르는 가로가 바로 대학가였다. 그 길을 따라 양 쪽으로 우람한 플라타너스들이 줄지어 있어 가히 가(街)라는 명칭이 어색하지 않았다. 또한 문리과대학 정문에서 좌우로 대학천 연변에는 개나리들이 숲을 이루었다. 문리과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봄이면 한번 찾아와 보는 이곳은 대학가에 제일 먼저 봄을 전하는 곳이었다. 이곳의 개나리가 한창일 땐 대학가 전체가 노랗게 물들 정도였고, 그래서 가히 ‘명소’라 할 만했다. 그러나 개나리와 은행나무, ‘세느 강’과 ‘미라보 다리’ 등이 분위기를 돋우는 이곳 대학가에 그 이름에 어울리는 고서점이 하나 없었다는 점은 유감이었다. 다른 대학가와 같이 호화로운 양장점이나 살롱이 없는 것은 다행이라 하겠으나, 학생들이 즐겨 찾아야 할 서점 대신 몇몇 음식점과 다방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었다.

학림다방(學林茶房)은 대학가의 또 다른 명물이었다. 그곳은 강의실만큼이나 학생들이 자주 들르는 곳이어서 당시 서울대학교 학생이라면 누구나 그 다방의 찻잔을 만져봤을 정도였다. 학림다방은 특히 가까이 있는 문리과대학이나 의과대학 캠퍼스 분위기와 호흡을 같이하였는데, 그래서 때때로 대학의 분위기는 그대로 이 다방 속으로 투영되곤 하였다. 학림다방이 생긴 것은 1950년대 초반이며, 문리과대학을 지칭하는 ‘학림(學林)’이란 말을 다방 명칭으로 사용하였다. 80여 명이 앉을 수 있던 그곳에 들어서면 피아노 한 대가 놓여 있었는데, 당시 학생들은 자주 피아노를 연주하였다고 한다.

동승동 캠퍼스 문리과대학 교정에 서 있던 마로니에 나무는 벌써 오래전부터 서울대학교의 상징이었다. ‘한국에 단 두 그루만 있다’는 희소성 때문만은 아니었다. 학생들은 이 나무를 사랑하여 대화 간에 종종 화제로 삼았고, 녹음이



그림 1-1-3 동승동 대학가 플라타너스 길



그림 1-1-4 강의실만큼이나 자주 들르던 학림다방



그림 1-1-5 서울대학교의 상징이던 마로니에 나무

우거질 때면 그 그늘에서 쉬기를 즐겼으며, 가을이면 '사랑의 열매'라 부르던 마로니에를 따려고 했다. 이 나무의 연원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사람이 없어 진부를 고증할 수는 없으나, 일설에 따르면 경성제국대학 당시 불문학 강사였던 한 프랑스 신부가 휴가로 고향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묘목 몇 그루를 갖다 심은 것이 이후 번창하게 되었다고 한다.

교수와 학생들에게 학문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 주던 중앙도서관. 동숭동 캠퍼스의 중앙도서관 건물이 건립된 것은 1930년 경성제국대학 시절이었고, 서울

대학교 개교 이후로도 수많은 인재들이 중앙도서관에서 진리와 정의를 깨우쳐 나갔다. 1973년 현재 도서관의 장서 수는 92만 6천 권이었으며 열람석 수는 총 284석이였다. 장서가 부족한 편이었고 학생 수에 비해 열람석도 매우 적었다. 한편 건물 앞에 두 평 정도의 분수대가 있었는데, 이 분수대는 맑은 날씨에 3미터 가량의 물을 뿜어내며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청량제 구실을 하였다.

도서관을 등진 쪽 문리과대학 캠퍼스 양지바른 터 위에는 4·19탑이 남쪽을 향해 서 있었다. 이 탑은 학생들과 함께 하면서 정의와 용기를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었다. 문리과대학 학생들은 거의 예외 없이 이 탑 주위에서 사회에 대해 발언하였다. 그리하여 '사건'이 일어나는 날에는 학생들과 기관원들 사이에 4·19탑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눈치싸움이나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관악 캠퍼스로 이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975년 봄 어느 날, 문리과대학 교정을 다시 찾은 『대학신문』의 한 기자는 다음과 같은 회한의 글을 남겼다.



그림 1-1-6 동숭동 캠퍼스 중앙도서관

주인이 떠난 옛 집은 이렇게도 쉽게 변해버리고 마는 것일까. 하나같이 굳게 자물쇠가 채워진 강의실들이 걷는 걸음을 더욱 무겁게 한다. 그들만치 우리와 비슷한 사물은 없었으리라. 다 낡아 빠져버려던 강의실이었지만 그 소리는 어찌면 그렇게도 맑았던지. 드디어 운동장, 우리는 이제 여기서 뛰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 더 높이 뛰도록 언제나 이곳을 생각할 것이다. ‘문리과대학의 발전적 해체를 위해서’가 부끄럽지 않도록. (『대학신문』 1975년 3월 24일자 「남겨두고 온 캠퍼스 순례 — 文理大편」)

한편 동승동 캠퍼스의 법과대학 본관 정문 왼쪽으로 는 낮고 작지만 역사를 응시하는 자세로 의연히 서 있는 ‘정의의 종’을 볼 수 있었다. 1956년 10월 20일, 개교 10주년을 기념하여 동창회에서 기증한 이 종은 정의를 이념으로 하는 법학도들에게 부단한 각성을 촉구하는

경종인 동시에 온갖 학내외 비리에 대한 망루였다. 4·19 혁명 당일 아침, 이 종은 성난 포효로 젊은이들의 피를 끓였고 그날 민주 제전에 목숨을 바친 박동훈의 장례식에는 애 끓는 조종(弔鐘)이 되기도 하였다. 관악 캠퍼스로 이전한 후 이 종은 자취를 감췄다가 1980년 봄에 법과대학 건물 앞에 다시 설치되었으나 곧 철거되는 등 잊지 못할 일화를 남긴 끝에 지금은 근대 법학교육 백주년 기념관 앞에 새로이 설치되었다. 법과대학의 얼굴이자 온 법과대학생의 정신적 고향이기도 한 법과대학도서관에는 판지로 칸을 막고 외계의 온갖 유혹과 잡음을 잊은 채 틀어박혀 공부에 열중하던 법과대학 특유의 열람석이 있었다. 그러나 현실 사회의 비리가 책에서 배워 온 정의와 용서할 수 없는 괴리를 보이면 열람실은 주저 없이 성토와 질정(叱正)의 농성장으로 변하곤 하였다.

중암동에 위치하였던 옛 상과대학 교정에서 가장 풍치가 좋은 곳은 상과대학의 야외 휴게소라 할 수 있는 소나무 숲, ‘향상림(向上林)’이었다. 향상림은 상과대학 본관 건물 앞 150여 평과 도서관으로 가는 100여 평의 공간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 소나무 숲에 향상림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1959년 제1회 홍릉제(洪陵祭) 개최 때의 일이었다. 당시 첫 야외음악제가 향상림에서 열렸는데, 상과대학생들의 패기를 기리는 뜻에서 ‘향상’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것이다. 홍릉제 때면 학생들은 파트너와 같이 이곳에서 데이트를 하곤 했는데, 특히 향상림의 설경은 가히 절경이라고 할 수 있었다. 3대에 걸쳐 상과대학 부근에 살았다는 한 노인의 말에 따르면, 1920년쯤



그림 1-1-7 문리과대학 캠퍼스에 세워진 ‘4·19 탑’



그림 1-1-8 동승동 법과대학 본관 정문 옆 ‘정의의 종’



그림 1-1-9 상과대학의 야외 휴게소, '향상림'

까지만 해도 상과대학과 근처 전체가 울창한 소나무 숲이었다고 한다.

용두동에 있던 사범대학의 명소 제1호는 흔히 사범대학 뒷동산이라고 불렸던 '청량대(淸涼臺)'이다. 합동연구실 뒤편 동산 한가운데에 이곳의 공기와 바람이 청량함을 알리는 비석이 서 있어서 동산 전체를 청량대라 부르게 되었는데, 이후 '청량'은 사범대학의 대명사 구실

까지 하게 되어 사범대학의 축제와 교지에까지 그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다. 청량대에는 조선 시대에 임금이 씨를 뿌리고 밭을 갈았다는 선농단(先農壇) 유적이 있어서 역사적 운치까지 더하였다. 그래서 가끔 이곳에서는 시화전 같은 행사가 열리기도 하였다.

사범대학의 또 다른 명물로는 정문에 들어서 한 길을 따라 올라가면 제일 먼저 눈에 띄었던 4·19 기념 동상을 들 수 있다. '젊은 학도, 봉화를 들었으니 사랑하는 겨레여, 4·19의 외침을 길이 새기라'라는 글귀가 새겨진 이 동상은 정의의 횃불을 밝히고 승화한 젊은 지성 손중근, 유재식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다. 동상은 현재 4·19탑 등과 함께 관악 캠퍼스의 4·19공원으로 옮겨져 있다.

음악대학에는 분수대를 둘러싸고 있는 잔디밭이 유일한 빈터였다. 그래서 음악대학의 행사는 거의 그 잔디밭에서 열렸다. 이곳은 야외 레슨이 이루어지는 야외 강의실이 되기도 하였고, 교수와 학생이 벌이는 가든파티 장소가 되기도 하였다. 또한 잔디밭 위로는 비록 몇 그루 되지는 않지만 버드나무가 늘어져 있어서 운치를 더해 주었다.



그림 1-1-10 사범대학 교정에 서 있던 4·19 기념 동상

옛 미술대학 건물은 본래 경성의학전문학교 건물로 쓰이던 곳으로서 동승동 대학가의 터줏대감 격이었다. 그만큼 건물의 역사도 오래되어 많은 학생들이 이곳을 거쳐 갔다. 초창기에 그 건물은 경성의전 해부 실험실로 쓰였고, 그 후 예술대학 강의실로 사용되다가, 마지막으로 미술대학에서 사용하였다. 따라서 미술대학생들에게 이 건물은 종합화 계획으로 이전하기까지 정든 교정으로 남아 있었으며 많은 감회를 느끼게 해주던 곳이



었다.

공릉동에 있던 공과대학의 명물로는 숲길과 늪이 있다. 공과대학 정문을 10여 미터 지난 곳에 전자계산소로 향하는 포장도로가 나 있었다. 길 양 옆에는 우람한 플라타너스가 1~2미터 간격으로 500여 미터나 뻗뻗이 서 있어서 시골의 신작로 같은 오붓함과 시원함을 함께 느끼게 해주었다. 잎이 한창 무성할 때는 길 한가운데 있어도 하늘이 안 보일 정도였고, 그래서 바로 옆 운동장 스탠드의 지붕 구실을 하기도 하였다. 그뿐 아니라 비 오는 날 숲길 위에 떨어진 플라타너스 잎을 밟으며 걷는 것은 무척이나 낭만적인 정경이었으며, 조용한 주위 경치는 숲길의 호젓함을 한층 더해주었다.

공과대학 숲길을 벗어나 4호관 건물 쪽으로 약 10미터만 걸으면 5백여 평 넓이의 아담한 늪이 나타난다. 그것이 바로 당시 서울대학교 캠퍼스의 유일한 늪이었던 ‘공대 늪’이다. 늪 주위에는 갈대와 잡초가 무성히 나 있어 초호(樵湖)로 불릴 만했다. 그 가장 자리를 따라 색 바랜 벤치가 몇 개 놓여 있어 수식 계산과 물리 실험에 열을 올리던 학생들이 가끔 이곳을 찾아 머리를 식히곤 하였다. 한때 공과대학에서 버린 병커C유가 그곳으로 흘러 들어가 오염 문제를 일으킨 적도 있었으나, 그 후 말끔히 제거되어 다시 조용한 정경을 자랑하였다.

1975년 1월 17일 오전 9시,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과학관 407호 강의실에선 동승동 캠퍼스에서의 마지막 수업이 진행되었다. 29년 동안 캠퍼스를 지켜온 화학과 최규원 교수는 25평 남짓한 강의실을 한 번 둘러본 후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수업입니다. 더 열심히 들어주기 바랍니다’ 라는 말과 함께 수업을 시작하였다. 한 시간 반 정도의 수업을 마치고는 학생들에게 ‘이제 동승동 캠퍼스를 떠난다고 생각하니 다시 못 올 고향을 떠나는 기분’ 이라는 감상을 남겼다. 관악 캠퍼스로의 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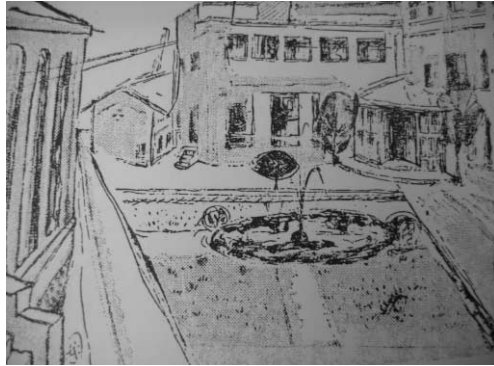


그림 1-1-11 음악대학 분수대



그림 1-1-12 공릉동 공과대학의 명물이던 플라타너스 숲길



는 그 후 3일 뒤인 1월 20일부터 시작되었다.

교정의 나무 한 그루와 강의실의 의자 하나까지도 각자의 추억에 따라서는 명소가 되어 있을 테지만, 이곳에서 담았던 모든 이야기와 웃음이 관악 캠퍼스에서 다시 뿌리 내리기를 기대할 뿐이었다. 추억을 담은 과거의 명소들 또한 이제 기억의 공간으로 이전을 준비해야만 했다.

## 2) 국립종합대학교의 탄생과 분산된 캠퍼스

1946년 8월 22일, 미 군정청 문교부는 ‘국립서울대학교설립에관한법령’을 발표하여 서울대학교의 탄생을 알렸다. 당시로서는 유일한 국립종합대학교가 탄생한 것이다. 서울대학교는 경성대학(구 경성제국대학)과 10개의 관공립 전문학교를 통합하여 1개의 대학원과 9개의 단과대학(문리과대학, 사범대학, 법과대학, 상과대학, 공과대학, 의과대학, 치과대학, 농과대학, 예술대학)으로 출발하였다.

이에 앞서 1946년 7월 13일에 발표된 ‘국립서울대학교설립안’(이하 국대안)의 요지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경성대학과 서울 내의 각종 관립 전문학교(예외로 사립인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도 포함)를 전부 폐지하고 새 이념과 새 구상 아래 우리 국가의 전 학계를 대표할 만한 거대한 종합대학교를 신설할 것이며, 이 새로운 고등 교육 기관은 ‘국립서울대학교’라는 명칭으로 부를 것이다. 둘째 국립서울대학교는 1946년 9월 신학기

부터 문을 열고, 셋째 그 운영은 이사회 아래에 총장, 부총장, 사무국을 두어 행한다는 내용이였다.

문교부는 이와 같은 안을 마련하기까지 기본 원칙이 ‘어떻게 하면 우리 고등 교육 기관이 우리 국가에 대하여 최대한 봉사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었음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고등 교육 기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지적하였다. 첫째 일제 하의 고등 교육 기관은 일관된 교육 안이나 계획 없이 조선의 진정한 복리를 무시하고 그때그때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였고, 둘째 쓸데없는 중복과 경쟁으로 국가 재정의 낭비가 심하였으며, 셋째 독립한 기관들



그림 1-1-13 '국대안' 발표 기사가 실린 1946년 7월 14일자 『동아일보』 지면

이 각기 소왕국을 형성하고 군웅할거 하여 피차 간의 아무런 협력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앞으로 국대안의 내용과 같이 최초의 국립종합대학교가 설립될 경우 각 학교의 기존 건물과 설비 그리고 전문 인력을 최대 한도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국가 재정상으로도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학생들 또한 더 많은 교육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소위 ‘국대안 파동’이라 불리는 1여 년 동안의 국대안 반대 운동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이유로 경성대학을 비롯한 여러 관공립 전문학교들은 국립서울대학교라는 이름 아래 모이게 되었다. 이로써 문패를 바꾸어 달기는 하였지만, 각 학교들은 대부분 기존의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었던 까닭에, 창립 당시 국립서울대학교의 각 캠퍼스는 각지에 분산된 상태였다. 몇몇 대학의 경우 수차례 교사 이전을 반복하기는 하였으나, 1975년 관악산 자락에 서울대학교 종합 캠퍼스가 새로 건립될 때까지 이와 같은 상태는 그대로 지속되었다. 아래에서는 관악 캠퍼스로 이전하기까지 각 대학 캠퍼스의 연혁을 살펴보도록 하자.

#### (1) 동승동 캠퍼스(문리과대학, 법과대학, 예술대학 미술부)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함께 일제 식민지기 유일의 대학이었던 경성제국대학의 교명(校名)은 사라지게 되었다. 해방 후 경성제국대학은 ‘서울대학’이란 새 이름으로 개칭되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서울’보다는 ‘경성’이라는 지역 명칭을 일반적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보통 ‘서울대학’보다는 ‘경성대학’이란 이름으로 불렸다.

경성대학 법문학부가 위치하였던 동승동 캠퍼스는 이후 서울대학교의 메인 캠퍼스 역할을 하게 되었다. 서울대학교 창립 당시 동승동 캠퍼스에는 대학본부를 비롯하여 문리과대학과 법과대학, 예술대학 미술부 등이 자리하였다. 경성대학의 법문학부 문과 계통과 이공학부 이과 계통의 통합 개편으로 이루어진 문리과대학은 문학부와 이학부로



그림 1-1-14 동승동 문리과대학 캠퍼스 전경



그림 1-1-15 문리과대학 교사

편제되었는데, 문학부는 동숭동 31번지 동숭동 캠퍼스 문리과대학 구내에 있었고, 이학부는 청량리 163번지 옛 경성제국대학 예과 건물에 있었다.

이후 한국전쟁의 발발로 문리과대학은 부산시 대신동 구덕산 기슭(서대신동 3가 54의 3번지)에 가교사를 건축하여

수업을 계속하였는데, 이곳에서 문학부 12개 학과, 이학부 5개 학과의 학생 총 854명이 수강하였으며, 이들을 가르친 교원 수는 56명이었다. 한편 1948년 9월에 편입되어 동숭동 199번지에 있던 의예과부는 피난하는 동안 대교로 2가 78번지에 교사를 마련하여 수업을 진행하였다. 다른 대학의 가교사와 달리 의예과부의 가교사는 4층 빌딩이었다. 수산 회사 사옥을 일부 임차한 것이기는 하나 대교실 2개, 부장실, 교무과장실, 학생과장실, 외래 강사실, 사무실을 각각 갖추었고, 생물실험실, 화학실험실과 각 준비실, 천평실, 암실 등의 시설을 갖춘 실험실을 부산시 서대신동 3가 54의 3번지에 따로 마련하였다.

서울로 돌아온 후 문리과대학은 동숭동 본교사로 복귀하였고, 1958년 8월에 이학부의 일부는 청량리 옛 교사로 다시 이전하였다. 이후 문리과대학 내 모든 학과가 동숭동으로 결집하게 되었으며, 1975년에는 관악 캠퍼스로 이전하여 정든 캠퍼스를 떠나게 되었다.

법과대학은 경성법학전문학교와 경성대학 법문학부 법학과가 발전적 폐지를 통해 통합함으로써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다. 서울대학교 창설 당시 법과대학은 청량리의 구 경성법학전문학교 교사에서 출발하였다. 그 후 교사를 동숭동으로 옮기자는 주장이 대두되었는데, 여러 우여곡절을 겪은 후 학부 1학년은 본부 대강당, 2학년은 강당 옆 강의실, 3학년은 의과대학 1교실에서 수업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1949년 2월에 이르러서야

경성대학 법문학부 자리인 동숭동 32번지로 이전할 수 있었다.

피난 시에는 부산시 서대신동 3가 136번지 부산공설운동장 앞 전차 종점 근처로 옮겨 가교사를 마련하였는데, 가교사의 철문 아치에는 ‘하늘이 무너지



그림 1-1-16 법과대학 교사

더라도 정의는 행하여 지어라' 라는 글이 있었다고 한다.

서울로 돌아온 후에는 동숭동 캠퍼스의 본교사를 계속 사용하였다. 1958년 당시는 옛 경성고등공업학교의 기계과 일부를 본관으로 사용하고, 전기과 일부를 미술대학과 같이 썼으며, 건축과와 토목과 자리를 강의실로 충당하는 실정이었다. 법과대학 캠퍼스 내엔 중앙공업연구소, 교양학부 강의실, 공과대학 소속의 직방공장, 문리과대학 이학부 일부, 국방부과학연구소 등이 각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중앙공업연구소는 캠퍼스 사용을 두고 법과대학과 오랜 시간에 걸쳐 충돌을 반복하였다. 법과대학은 이후 1975년에 관악 캠퍼스로 이전하였다.

예술대학은 서울대학교 설치와 함께 새로 창설되었다. 예술대학은 음악부와 미술부로 편제되었는데, 미술부는 창설 당시 따로 교사가 없어 문리과대학 3층과 부속 박물관 동북편의 목조 건물을 교사로 사용하였다. 그러다가 1949년 4월에 경성공업전문학교 자리로 이전하였다. 1953년 4월 20일에 미술부는 미술대학으로 승격 개편되었다. 미술대학은 1963년 4월 초 조소과를 제외한 나머지 두 학과와 부속실, 학장실 등을 모두 옛 경성의학전문학교가 있던 연건동 수의과대학 자리로 옮겼다. 조소과는 실기 작업 관계로 뒤늦게 옮기게 되었다. 수의과대학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대학 당국과 미술대학 신축 이전 문제로 첨예하게 갈등을 겪었고 일부 학생들의 이전 반대 시위도 있었다. 그렇지만 결국 1963년 봄학기부터 미술대학은 수의과대학 건물로 이전하여 수업을 받게 되었다. 그 후 서울대학교 종합화 계획의 일환으로 잠시(1973~1975년) 공릉동의 공과대학 내 교양과정부 건물(행정 구역상으로는 성북구 하계동 78번지이나 공릉동 캠퍼스로 불렸다)을 교사로 사용하다 관악 캠퍼스로 이전했다.

## (2) 연건동 의과대학 캠퍼스

의과대학은 경성대학 의학부와 경성의학전문학교가 통합 개편하여 만들어졌다. 의과대학은 발족 당시부터 연건동에 교사를 두었는데, 현재까지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의과대학 본관 건물과 부속 병원 건물은 현재도 과거의 모습 그대로 남아 있다.

피난 시절에는 부산시 광복동 2가 3번지에 임시 교사를 마련했으며, 부속병



그림 1-1-17 미술대학 교사(동숭동 캠퍼스 시절)



그림 1-1-18 연진동 의과대학 캠퍼스 전경

원은 광복동 3가 2번지 의과대학 바로 길 건너편에 자리 잡았다. 또 하나의 부속 기관인 3년제 부속고등간호학교는 송도에 자리하였다.

### (3) 공릉동 공과대학 캠퍼스

공과대학은 경성고등공업학교와 경성광산전문학교, 그리고 경성대학 이공학부 공과 계통의 발전적 통합으로 이루어

졌다. 공과대학 교사는 창립 때부터 성북구 공릉동 172번지, 곧 경성대학 이공학부 자리였다.

피난 시절에는 부산시 서대신동 3가의 가교사를 사용하였다. 연건평 11,339평의 공릉동 캠퍼스에 비교하면 가교사의 건평 458평(대지 1,180평)은 24분의 1밖에 되지 않는 협소한 건물이었으나, 대교실 4곳, 중교실 1곳, 소교실 16곳, 제도실 3곳, 화학실험실 2곳, 물리실험실과 금속공학실험실, 학장실 등은 각각 1곳씩 갖추었다.

서울로 돌아온 후에는 잠시 용두동에 있는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내 임시 교사를 사용하기도 했다. 이후 다시 공릉동으로 캠퍼스를 옮겼고, 1980년에 관악 캠퍼스로 이전을 마쳤다.

### (4) 수원 농과대학 캠퍼스

농과대학은 1904년 대한제국 학부가 한성부 수진동에 창설한 농상공학교 농과에 기원을 둔다. 농과는 1906년 9월 ‘농림학교관제’에 의해 농상공부 소관으로 분리 독립하여 ‘농림학교’로 개칭하였고, 이듬해에는 경기도 수원시에 신축 완료한 신교사로 이전하였다. 농과대학의 수원 캠퍼스와 인연은 이 때부터 시작되었다. 1910년 일제의 한국 병합 이후 ‘조선총독부농림학교’로 개칭하여 권업모범장에 부속되었다가, 1918년 3월 학무



그림 1-1-19 공릉동 공과대학 캠퍼스 전경

국 소관으로 이관하여 '수원농림전문학교'로 승격되었다. 1922년 3월 '조선총독부제학교관제'가 공포됨에 따라 '수원고등농림학교'로 개칭하였고, 1944년 4월에 다시 '수원농림전문학교'로 개칭한 후 해방을 맞이하였다.

수원농림전문학교는 1946년 8월 국립서울대학교의 창설과 함께 국립서울대학교 농과대학으로 발족하였다. 농과대학은 1992년에 '농업생명과학대학'으로 이름을 바꾸고, 2003년에 관악 캠퍼스로 자리를 옮김으로써 서울대학교 종합화의 마지막 자리를 채웠다.



그림 1-1-20 수원 농과대학 캠퍼스 전경

#### (5) 종암동 상과대학 캠퍼스

상과대학의 전신으로는 1907년 재일본동양협회(在日本東洋協會)에서 설립한 동양협회전문학교(후일 척식대학) 경성분교를 들 수 있다. 동양협회전문학교 경성분교는 1918년부터 동경의 본교와 완전히 독립하여, 1919년에 교사를 송인동에 신축하여 이전하였다. 1920년에 교명을 '사립경성고등상업학교'라 개칭하였으며, 1922년에는 조선총독부로 이관되어 '관립경성고등상업학교'가 되었다. 1939년 재단법인 우석학원(友石學院)이 경성부 종암정(鍾岩町)에 신축 중이던 건물을 차용하여 이전하였고, 구 교사는 조선총독부 세무감독국으로 인계되어 우석학원이 경영하는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가 되었다. 우석학원은 이듬해인 1940년에 신축 교사 및 부속 건물을 경성고등상업학교에 헌납하였다. 상과대학의 종암동 캠퍼스는 이로부터 유래하는 것이다. 이후 1944년에 교명을 '경성경제전문학교'로 개칭하였고, 해방 후 국립서울대학교 발족과 더불어 상과대학으로 편입하게 되었다.

피난 당시에는 종암동 교사를 떠나 부산시 서대신동 3가 95번지에 임시 교사를 마련했다. 비록 임시 교사이기는 하였으나 대강의실 5곳과 교실 2곳, 강당, 도서관, 사무실 등을 구비하였다. 서울로 돌아온 후에는 종암동 본교사를 사용



그림 1-1-21 종암동 상과대학 캠퍼스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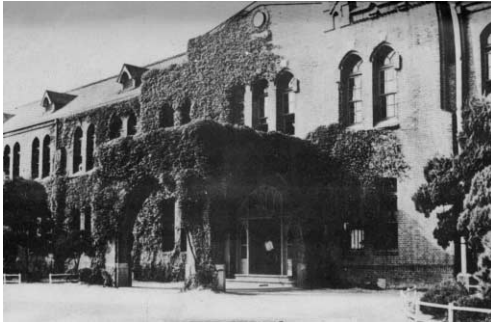


그림 1-1-22 을지로 5가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교사

하다가 후에 관악 캠퍼스로 이전하였다.

**(6) 을지로 사범대학 캠퍼스**

사범대학은 해방 후 경성사범학교와 경성여자사범학교가 ‘국립서울대학교 설립에관한법령’에 의하여 통합 개편되어 만들어졌다. 사범대학 발족 당시 교사는 서울시 중구 을지로 5가 40번지에

있었다.

피난 시절에는 부산시 서대신동 3가 130번지에 터를 잡아 신축하였는데, 이 임시 교사는 대지 642평에 건평이 232평이었다. 또 사범대학은 다른 단과대학과 달리 피난 중에도 남녀 기숙사를 각기 서대신 3가 116번지와 가교사 내에 마련하였다. 서울로 돌아온 후 을지로 5가 본교사에 머물다가 용두동 교사로 이전했으며, 1975년에 관악 캠퍼스로 이전했다.

**(7) 소공동 치과대학 캠퍼스**

치과대학의 전신은 1922년 4월에 창설한 경성치과의학교이다. 당시 교사는 조선총독부의원 및 경성의학전문학교 건물 일부를 차용한 것이었다. 그러나 임상 실습실이 부족하여 1924년 4월에 당시 황금정(黃金町)(현 을지로) 일본생명보험주식회사의 건물 일부를 차용해서 부속 기관을 이전하였다. 이후 1927년 3월 21일에 무상 양여받은 남대문로 3가 관유지 662평에 신축 교사를 준공하여 1928년 9월 2일 교사 및 부속 병원을 이전하

였다. 이곳이 서울대학교 발족 당시 치과대학이 위치하였던 소공동 교사 자리이다. 해방 후 경성치과의학교는 국립서울대학교에 편입되었다.

피난 시절에는 부산시 중구 대청동 4가 2번지에 임시 교사를 마련했다. 대강의실과 중강의실이 각각 1곳, 소강의실이 2곳, 기타 학장실, 직원실, 숙직실, 창고 등을 갖추었으나 빈약한 시설이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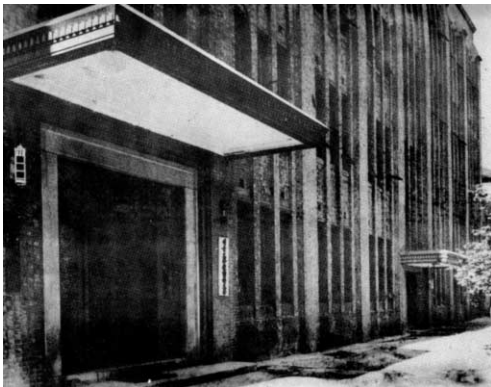


그림 1-1-23 소공동 치과대학 교사

다. 부속 병원은 부산시 토성동 경찰병원 내와 광복동 치과금의원 내에 두었다. 서울로 돌아온 후에는 소공동 본교사를 사용했고, 이후 연건동 의과대학 구내에 교사를 신축하여 1969년 12월 28일에 이전하였다.

### (8) 남산동 예술대학 음악부 캠퍼스

예술대학 음악부의 전신인 경성음악학교는 1945년 12월에 인가를 얻어 개교하였다. 1946년 5월 중구 남산동에 소재한 구 조선신궁 자리로 교사를 이전하였으며, 국립서울대학교 발족에 따라 서울대학교에 편입하여 예술대학 음악부로 개편되었다. 이후 전쟁이 발발하여 피난을 떠나게 되자 음악부는 부산시 압남동에 가교사를 마련하였다. 음악부는 1953년 4월 20일 미술부와 마찬가지로 음악대학으로 승격 개편되었다.

서울로 돌아온 후 음악대학은 동숭동 법과대학 내 임시 교사를 사용하다가 연건동의 과대학 구내 함춘원 한 구석으로 옮겼다. 함춘원 시절의 교사는 2층 본교사와 리사이트 홀 등을 포함하여 3,200평 터전에 자리를 잡았다. 이후 1959년에 을지로 6가에 있는 약학대학과 교사를 바꾸었고, 1975년 12월 관악 캠퍼스에 음악대학 예술관이 완성됨에 따라 1976년 3월 관악 캠퍼스로 이전하여 현재에 이른다.

이와 같이 서울대학교의 초창기 캠퍼스들은 각지에 분산되어 있었다. 서울대학교는 역사와 전통이 다른 기존의 고등 교육 기관들을 당국의 행정력, 즉 외적 힘으로 종합하여 세워졌다. 그러므로 대학 간 원심력과 구심력의 균형, 전체와 부분의 이념상 통일 등은 서울대학교 창설 당시부터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었다. 종합대학교로서 국립서울대학교를 창설한 의의는 이와 같은 과제를 얼마나 잘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었다.

### 3) 파괴와 재건

서울대학교는 창립과 더불어 주어진 과제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가운데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함에 따라 더 큰 시련을 맞이해야 했다. 그렇지만 난국에 직면할수록 교육의 국가적



그림 1-1-24 음악대학 교사(연건동 캠퍼스 시절)





그림 1-1-25 전시인  
1951년 부산 동대신동 대  
학본부



그림 1-1-26 1951년 부  
산 소재로 세운 문리과대  
학 가교사

중요성은 강조되어, 전란의 와중에도 전 시연합대학이 운영되었고, 교육에 관한 일련의 법령이 공포되었다.

전쟁이 일어나 고등 교육 기관의 개별 운영이 불가능해지자 1950년 10월 연합 수업을 시작한 것이 형태상 전시연합대학의 시작이었다. 이듬해에는 1·4후퇴로 모든 기관이 소개(疏開)함에 따라 서울의 전시연합대학도 남하하였다. 당시 국립서울대학교 임시 관리 책임자였던 김두헌 박사의 노력으로 3월 17일부터는 전시연합대학을 재개할 수 있었다. 1951년 5월 4일 백낙준 문교부 장관이

문교부령 제19호로 공포한 ‘대학교육에관한전시특별조치령’에 따라 문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전시연합대학을 문학부, 이학부, 의약학부, 농수산학부, 법정경상학부, 수의학부, 예술학부, 체육과, 가정과로 편성하였다.

당시 어려운 문제들 중 하나는 수업을 재개할 수 있는 공간의 부재였다. 1·4후퇴 직후에는 노천에서 수업을 실시하다가, 1951년 4월 학부형이 자재를 부담하고 교수와 학생이 공동으로 작업하여 가교실을 건축하는 계획을 세웠고, 동년 10월부터 소위 피난 학교 가교사 건축을 시작하였다. 한편 미8군단은 목재 시멘트 등 1,000 교실 분의 건축 자재를 원조하였는데, 이 중 서울대학교는 문리과대학에 10교실, 의과대학에 10교실, 사범대학에 31교실을 지을 수 있는 분량을 배정받았다.

각 대학별 가교사 상황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전란기에 새롭게 편입한 약학대학과 학부에서 대학으로 승격한 수의과대학에 대해서만 캠퍼스 연혁을 잠시 살펴볼 것이다.

### (9) 을지로 6가 약학대학 캠퍼스

약학대학의 전신은 1915년 6월에 약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선약학강습소였다. 조선약학강습소는 1916년 6월 1일에 ‘사립조선약학교’라고 개칭하였다. 1930년 4월 일본 문교성 전문학교령에 의해 ‘경성약학전문학교’로 승격된 후 1947년 6월 ‘사립

서울약학대학'으로 개편되었다. 1950년 9월 30일에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으로 편입하였는데, 편입 당시 을지로 6가 교사는 편입 이전부터 계속 사용해 오던 것이었다.

전쟁의 발발로 약학대학은 을지로 6가 본교사를 떠나 제1 가교사를 부산시 봉래동 3가에, 제2 가교사를 부산시 남항동에 두었으며, 사무소와 도서관, 실험실은 대청동에 설치하였다. 교실은 각 교수의 연구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는데, 분석화학교실, 무기약품화학교실, 유기약품화학교실, 생물화학교실, 제제학교실, 생약학교실, 식물교실 등의 7개 교실이 있었다. 서울로 돌아온 후에는 다시 을지로 본교사로 옮겼다가, 1959년에 의과대학 구내 음악대학과 교사를 바꾸었고, 이후 관악 캠퍼스로 다시 이전하였다.



그림 1-1-27 을지로 6가 약학대학 교사

#### (10) 연건동 수의과대학 캠퍼스

전쟁 중인 1953년 4월 20일 국립학교설치령(대통령령 제780호)에 따라 농과대학 수의학부는 수의과대학으로 분리 승격되었다. 농과대학 수의학부는 1947년에 농과대학 수의축산학과에서 분리되면서 연건동 옛 경성의학전문학교 건물에 자리를 잡았다. 피난 시절 농과대학 수의학부가 피난처로 자리 잡은 곳은 국립중앙기축위생연구소였다. 수의학부는 이 연구소의 완비된 실험시설을 전부 제공받았다. 그리고 수의학부장 오순섭 교수와 친분이 있던 영국인 수의학자 비치우드(O. T. Beechwood) 박사의 주선으로 콘크리트 기초 위에 강의실을 새롭게 건축하여 사용할 수 있었다.

다시 전시연합대학을 구성하여 합동 수업을 실시한 1년 동안 비록 전시이기는 하였지만 각 대학이 독자적인 수업 태세를 갖추면서 전시연합대학이라는 비상 조치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하여 문교부는 관계 각 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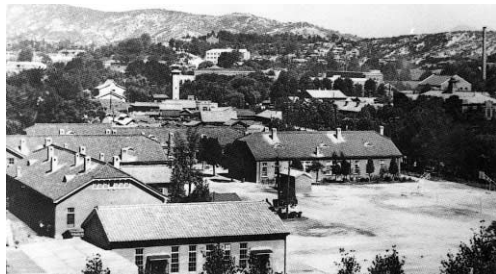


그림 1-1-28 연건동 옛 경성의학전문학교 건물에 들어선 수의과대학

과 협의한 후 1952년 5월 31일자로 연합대학에 중지부를 찍었다.

부산에 남하한 서울대학교는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 졸업생의 진학을 위하여 1953년 1월 24일 동국대학교에서 개최된 소개 대학장 회의를 통해 서울에 분교를 두기로 결정하고, 4월 15일부터 을지로 6가에 있는 약학대학 교사에서 개강하였다. 여기에는 신입생만 입학할 수 있었는데, 1953년도 입학생은 372명이었으며, 성균관대학교 등 타 대학 수강생은 150명이었다. 이로써 1953년도 1학기에 서울대학교 캠퍼스는 부산, 서울, 수원(1951년 9월 농과 대학은 수원으로 먼저 복귀하였다) 등지에 분산하여 있게 되었다.

1953년 7월 휴전 협정 체결과 함께 각 대학들도 환도를 서두르기 시작하였다. 서울대학교는 전쟁의 참화를 딛고 일어서야 하는 새로운 출발점에 서게 된 것이다. 전후 개교 10주년을 맞이한 1956년 10월 15일자 『대학신문』에는 개교 이래 지난 10년의 역사를 아래와 같이 돌아보았는데, 이를 보면 전후복구라는 커다란 짐을 한쪽 어깨에 짊어진 채로 종합대학교로서 내실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 또한 새롭게 시작해야 했음을 알 수 있다.

본교의 이상은 명실상부한 종합대학교로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교는 해방 후 즉시 종합대학교로 개편하였다. 12개 대학을 묶어서 억지로 종합대학이라는 관사를 씌움으로써 종합대학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12개의 단과대학이 동일한 이상과 목표 아래 굳게 단결되어 완전한 한 개의 대학교로 행동하고 그 운영의 공좌가 12개의 대학에 동등하게 영향을 주어야 완전한 종합대학교라고 할 것이다. 원래 종합대학교가 순서 있게 발전하려면 먼저 2, 3개의 대학이 생긴 후 연차적으로 동일한 교육방침과 운영방침에 일정한 전통을 유지하며 발전시켜야 순조로울 것인데 서울대학교와 같이 역사가 다르고 전통이 다른 시설된 수 개 대학을 종합하여 한 개의 대학교로 완성하려는 이 지난한 사업이 일시에 만족한 성과를 기대하기는 물론 어려운 것이다.

전쟁과 함께 부산에 소개하였던 각 대학들이 서울로 돌아온 후 가장 먼저 나선 일은 교사의 접수였다. 휴전 협정을 체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953년 8월 7일에 서울대학교의 단과대학들은 환도를 위한 복귀 업무를 시작하여 10월 17일에 완료하였다. 8월 2일에는 미8군사령부가 1951년 5월 이후 사용해 오던 동송동 캠퍼스를 반환하고 용산으로 이전하였으며, 9월 15일에는 최규남 총장에게 정식으로 교사를 반환하였다. 그러나 의과대학은 여전히 미5공군이 사용 중이었고, 음악대학 등의 교사는 완전히 불타 없어졌다.

캠퍼스가 파괴되거나 아직 인수받지 못한 단과대학들은 다른 대학 캠퍼스에 임시 수용되었다. 공덕리의 본교사가 미군병원으로 사용되던 공과대학은 용두동의 사대부속중학교 임시 교사에, 수의과대학과 음악대학은 동숭동 법과대학에, 의과대학은 문리과대학 임시 교사에 세를 들었다. 그렇지만 이후 미군에게서 교사 반환이 차차 이루어져 10월 29일에는 수의과대학이 미8군으로부터 교사를 인수받아 완전히 복귀하였으며, 이듬해 3월 1일에는 의과대학도 미5공군에게서 연건동 본교사를 반환받았다. 그리고 공과대학은 1954년 8월 6일이 되어서야 드디어 1년 가까이 임시 교사살이를 마치고 본교사에 복귀할 수 있었다. 수의과대학의 오순섭 학장은 3년간의 피난살이는 말할 것도 없고 서울로 돌아온 후에도 결방살이를 면치 못하다가 이제 늦게나마 파괴된 교사일지라도 본교사를 찾게 되니 실로 감개무량하다'고 그 소감을 밝힌 바 있다.



그림 1-1-29 1953년 10월 15일, 서울대학교 환수식

전란은 시설 면에서 서울대학교에 큰 피해를 주었고, 이의 복구를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였다. 전쟁 이전 458동, 62,527평에 달하던 건물 중 수리 혹은 재건해야 할 건물이 276동 24,313평이었다. 모든 시설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12억 6천만 원의 비용이 필요하였는데, 이는 1953년도 국가 예산의 약 1할에 달하는 것이었다.

국립대학은 원칙적으로 국고 예산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전쟁 후 국가 재정은 서울대학교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염출할 수 없었고, 후원회비의 징수로도 서울대학교의 정상 운영을 기대할 수는 없었다. 서울대학교 창립 당시 국립대학교로는 서울대학교 하나만 설치하려던 문교부 정책이 이후 견지되지 못하여 그동안 4~5개의 국립대학이 증설되었다. 문교부 예산은 제한되었는데 국립대학은 증설되다 보니 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은 증액어느덧 감소되어 가는 경향을 보였다. 1950년도 서울대학교 예산은 대학 교육비의 86.5%를 차지하였으나 1958년도에는 36.5%밖에 안 되었으며, 이러한 실정은 다른 국립대학도 마찬가지였다.

그리하여 문교부는 부득이하게 1957년 3월 7일자로 각 국립대학에 훈령을 내려 수의자 부담 원칙에 입각한 '시설확충기성회'를 조직하도록 하였다. 학생들이 시설비와 기성회비 부담을 거부하였던 '등록 파동'으로 인해 기성회비 납부가 중단되기도 하였지



그림 1-1-30 전쟁 중 불타 버린 농과대학 제1호관

만, 1957년 2학기부터 1961년 2학기까지 기성회 총수입은 약 9억 6천만 원에 이르렀다. (이는 이 기간 국고 예산을 합한 10여억 원과 비슷한 금액이었다.) 기성회 수입은 1957년도에는 문리과대학과 상과대학에, 1958년도에는 상과대학, 수의과대학, 행정대학원에 집중 투입되었고, 1959년도부터는 각종 기관에

안배되었다. 농과대학과 법과대학, 공과대학의 경우 국제협조처(ICA) 원조를 받았으므로 기성회재단의 배당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한편 이와 같은 재정적 곤란 속에서 전쟁의 피해 복구를 위한 자금 마련은 결국 외원(外援)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미국의 대외활동본부(FOA)는 서울대학교의 교육과 연구 활동의 발전을 위하여 1953년에 농학, 공학, 의학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원조 계약을 체결하였다. 미국의 미네소타대학교가 이 원조 계획의 실행을 담당하게 됨에 따라 미네소타대학 사절단 일행이 서울대학교에 파견되었으며, 1954년 9월 28일에는 이 사절단의 보고서에 근거하여 ‘미네소타 프로젝트(Minnesota Project)’라는 이름의 원조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듬해 원조 사업의 주관 단체가 대외활동본부(FOA)에서 국제협조처로 바뀌었는데, 이 원조 계획은 처음부터 교수의 교환뿐만 아니라 시설과 설비의 개선, 건물 보수와 신증축을 뚜렷한 목표로 설정했다는 데 특징이 있었다.

1954년 9월부터 시작된 미네소타 프로젝트는 1962년 6월말 서울대학교에 주재하던 미네소타 고문이 본국으로 귀환함으로써 일단락 되었다. 그동안 원조받은 총액은 무려 1천만 달러에 상당하는 거액이었다. 부문별로 보면 시설 부문에 2,679,000여 달러와 대충 자금 3억 5천만 원, 기재와 기구 도입에 272만여 달러와 대충 자금 231만 원, 그리고 도서비로 156,200여 달러, 총 218명의 인사 교류(교환 교수 계획에 의함)에 348만 9천여 달러였다.

원조 수혜를 받은 각 대학 시설의 발전상을 보면, 먼저 농과대학의 경우 해방 후 거의 아무런 시설의 증가가 없었고, 한국전쟁 중에도 2차에 걸친 국군의 후퇴로 건물의 38%를 상실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어 고등기술교육기관으로서 면목을 유지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농과대학이 미네소타 프로젝트에 의해 배정받은 시설 복구비만 해도 미화 120만 달러, 한화 10억여 원에 달했다. 본관이 3층으로 증축되었고 강당이 새로 세

워졌으며 신관이 준공되었다. 또 500여 명의 수용 능력을 가진 기숙사는 서울대학교에서 제일 규모가 큰 것이었다. 도서관, 식당 등이 준공되어 영내 연구 생활에 많은 편의를 제공해 주었으며, 각과의 실험 실습장이 완비되었다. 또한 농과대학은 전라남도애 49,000평에 달하는 연습림을 보유하고었는데 한국전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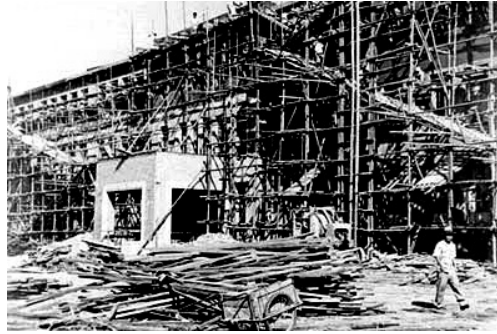


그림 1-1-31 미네소타 프로젝트에 의한 원조로 복구, 증축 공사 중인 농과대학 제1호관

중 파괴된 연습림의 시설 복구를 위해 5,000만 원이 지출되었다. 1959년도까지는 원조액의 대부분을 건물 복구와 신축 등에 충당하였으나 1960년부터는 도서, 실험 실습 기재 등을 마련하는 데 주안을 두어 현저한 성과를 거두었다.

의과대학의 경우 국제협조처 원조 자금 68만 달러로 의과대학 건물과 병원을 개축 수리하였고, 5만 갤런의 저수 탱크를 만들고, 기타 난방 환기 시설을 완비하였으며, 간호학과 건물을 준공하였다. 또 50만 달러의 국제협조처 원조로 X-Ray 치료기, 전기 심도기, 기초임상양용혈액가스측정기, 조직배양시설, 현미경(200대) 등 각종 시설과 실습 기재, 기구를 도입하였다.

공과대학은 건물 43동 중에서 21동(건평 52,566평)이 전화를 입었고, 그중에서도 4호동의 가스 제조실과 16호동의 차고가 격심하게 폭격을 당하였으나, 원조에 힘입어 완전 복구하였다. 그리고 약 60만 달러에 해당되는 자재를 미국에서 도입하여 6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최신식 기숙사를 건축, 1962년 3월에 ‘청암사(靑巖舍)’라는 이름으로 개사하였다. 내부 시설을 보면, 미국 MIT 공과대학의 선박모형 시설보다 3m가 더 큰 한국 초유의 선박모형 시험수조와 고속 실험기를 설치하였고, 1961년 9월부터는 전자자동계산 실험실, 가솔린 및 중유 기관 1대가 설치된 50마력의 전자압력측정 다이내모메타가 완성된 내연기 실험실을 세웠고, 미국에서 최신의 전자식 응용 측정기 및 기록 장치를 도입하였다. 또 응용 해석 실험실, 토질 실험실, 탄소 신속 분석 장치(고주파 가열식), 송광험기(送鑛驗機), 강신도 실험기, 직유물리실험실(纖維物理實驗室) 등이 설치되었는데, 이들은 국내는 물론 국외에도 희귀한 시설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수의과대학은 1954년에 성북구 하월곡동에 부속실험동장사육장을 신설하였고, 원조 자금과 기성회비 일부로 강의실 6곳, 실험실 4곳, 도서실, 회의실, 기타 사무실을 포함하는 최신식 2층, 3층 건물을 1961년 7월에 착공하여 11월에 준공하였다. 이

로써 총건평 1,254평의 건물과 약 13,000평(전쟁 전 9,500평)의 교지를 갖게 되었다. 또 치과대학은 유엔한국재건단(UNKRA)과 국제협조처 원조에 의하여 일제 치료 기재 한대를 미제 기재로 바꾸었고, 옥상에 도서실을 마련하였으며, 부속 병원에 종래 40여 개 밖에 없던 체어유니트를 1961년에는 60여 세트로 늘려 임상 실습을 하게 되었다. 한국 전쟁 전에는 실습 능력 보유자가 불과 60명밖에 없었으나, 1961년에는 그 두 배인 120명의 원내생을 지도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전후 복구의 성과들이 눈앞에 드러나기 시작하자 종합대학교로서 내실을 갖추기 위한 노력들도 재개되었다. 명실상부한 종합대학교의 실현은 우선 분산된 캠퍼스들의 실태를 조사하여 정확한 현실을 파악하는 작업에서 비롯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실태 조사에 바탕하여 종합화 실현을 위한 구상을 본격적으로 마련하였다.

## 제 2 절 종합캠퍼스의 구상 · 건설 · 이전

### 1) 종합화의 구상

1959년 초 뉴욕대학교의 스토타드 박사는 서울대학교 각 단과대학이 미국 대학들과 체결한 계약을 통해 얼마나 성과를 이루었는지 살피고자 60일 간 서울대학교를 답사하였다. 그는 몇몇 공사립 대학들에 대한 조사까지 수행한 후 한국 고등 교육 기관의 교육 상황과 시설 개선 대책에 관한 광범위한 건의서를 제출하였는데, 이 건의서에서 그는 고등교육제도의 전반적인 개편 방침을 수립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에 조사단을 파견, 그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 고등 교육 기관의 실태 조사를 위한 조사단이 꾸려졌고 뉴욕대학교 교육대학장인 앤더슨(Walter A. Anderson) 박사가 조사단장을 맡았다. 이 조사에서는 비단 서울대학교뿐만 아니라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경북대학교, 부산대학교 등 국립 대학교와 춘천농과대학, 부산수산대학, 공주사범대학, 광주사범대학, 부산사범대학 등과 같은 국립 단과대학, 그리고 안동, 제주, 진주, 전주, 춘천, 청주 등에 있는 각 사범대학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1959년 10월과 11월에 조사단 일원인 미들브룩(William T. Middlebrook) 박사와 린

데만(Richard H. Lindeman) 박사는 문교부와 주한미국경제협조처(USOM) 교육 관계 직원, 서울대학교 교직원들과 함께 전반적인 조사 방침을 수립하고, 각 대학교와 단과대학에서 제공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1960년 1월과 2월에 미국 내 각 분야 전문가들이 내한하여 전문 분야별로 이미 수집 요약한 기본 자료들을 연구하였고, 몇몇 학교를 실지 방문하여 각 대학 교원들을 면담하였다. 이후 이들은 조사단 전체 회의에서 조사 결과를 전체적으로 검토한 끝에 『한국국립고등교육기관 실태조사보고서』(1960)를 완성하였다.

이 보고서는 행정 기구 형태를 기준으로 하여 한국의 국립 고등 교육 기관을 중앙 집권형, 반(半)중앙 집권형, 권력 분산형 등 세 종류로 분류하고, 서울대학교를 권력 분산형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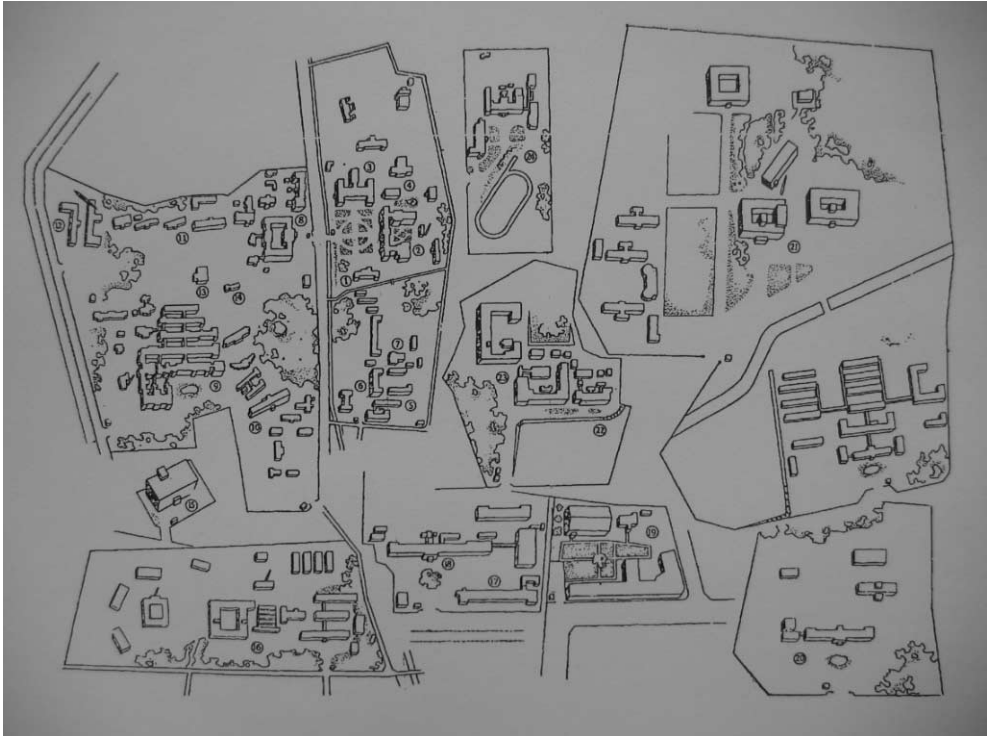
이 대학교는 발족 당시 대략 8개 지역에 분산되어 소재하는 14개 단위의 학교로 조직되었다. 오늘날에도 이 대학교의 술하기관(率下機關)은 여전히 서로 멀리 떨어진 3개 교지에 위치하고 있다. 즉 이 대학교는 행정상으로는나 지리상으로는나 한 번도 중앙집권화를 해 보지 못한 것이다. 이 대학교는 원래가 대학교의 이름 아래 여러 개의 단과대학이 연합해서 생긴 것이다. (大韓民國 文敎部 駐韓美國經濟協助處(USOM), 『韓國國立高等教育機關 實態調查報告書』, 36~37쪽)

말하자면 문리과대학은 동숭동에 있지만 이학부 물리학과는 청량리에 있고 공과대학은 신공덕동에 뚝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지리적 분산 때문에 문리과대학에 수학과, 화학과, 물리학과가 있는데도 공과대학은 그 학과들을 따로 중복해서 두어야만 했다. 이 같은 문제는 농과대학과 사범대학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 때문에 위 보고서는 서울대학교가 너무도 여러 군데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종합대학교가 당연히 해야 할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평가하였고, 이러한 문제는 언제나 시설 중첩과 교육 기회 제한과 같은 비경제성을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위 보고서는 서울대학교가 앞으로 캠퍼스 종합화를 지향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즉 시설 면에서 이미 투자액이 상당하였던 공과대학과 넓은 실습지가 필요한 농과대학을 제외하고 모든 단과대학을 중앙의 한 교지 안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이전 대상 교지에서 진행되는 모든 신축 공사는 중지해야 하며, 필요한 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토지 매입과 교환 등 가능한 모든 기회를 이용해야 한다고



그림 1-1-32 서울대학교 소속기관 조감도(『서울대학교 요람』 1959~60).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연건동 의과대학·미술대학 캠퍼스, 동숭동 문리과대학·법과대학 캠퍼스, 종암동 상과대학 캠퍼스, 공릉동 공과대학 캠퍼스, 청량리 문리과대학 이학부(일부), 을지로 6가 음악대학 캠퍼스, 을지로 5가 사대 부속고등학교·부속국민학교, 수원 농과대학·수의과대학 캠퍼스, 소공동 치과대학 캠퍼스이다. 그리고 가운데는 용두동 사범대학 캠퍼스와 부속중학교이다.



권고하였다. 구체적으로 대학 당국자는 지체 없이 상공부 당국과 절충해서 청량리와 종암동에 소재한 대학 소유 토지와 건물을 법과대학 근처의 상공부 소관 중앙공업연구소와 교환토록 해야 하며, 또 수의과대학은 수원의 농과대학 구내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이 보고서가 작성된 지 약 10여 년 후 ‘서울대학교 종합10개년계획’이 진행되던 상황에서 ‘서울대학교 종합10개년계획은 왜 필요하나?’라는 부제로 『서울대학교 종합화 계획 해설』이라는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이 보고서가 지적한 서울대학교의 문제점은 더 다양하고 직설적이었다. 보고서는 서울대학교가 전통과 지도 이념이 결여된 까닭에 미국식 제도를 수입해 놓고도 그 제도를 운영할 때는 일제 유산인 관료적 통제로 일관하였으며, 설립 경위와 배경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도 분산된 잡다한 학교들을 단지 기계적으로 결합시켜 놓은 까닭에 서울대학교는 종합대학교가 아니라 연합대학의 성격이 짙다고 지적하였다. 이로 인해 각 단과대학의 인력과 시설을 낭비하고 있으며, 지식의 총본산은커녕 자칫하면 단일한 조직체로서의 의식마저도 상실할지 모른다고 비판하였다.

서울대학교는 결국 창립과 함께 부여된 과제, 즉 각 대학의 원심력과 구심력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했던 애초의 과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것이었다. 주어진 여건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립종합대학교로 창설된 서울대학교는 결국 똑같은 이유, 즉 인력과 시설의 낭비라는 비효율성과 비합리성 때문에 또다시 대학의 종합화를 요구받았다.

서울대학교는 전란 피해를 복구하고 내부 질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종합화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그리하여 서울대학교는 개교 이래 처음으로 명실상부한 종합대학교로서 제반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1958년 11월 19일 '종합계획수립위원회'를 조직하여 교사 배치 및 시설 확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케 하였다. 이 위원회는 위원장에 총장 윤일선, 위원에 교학국장 유기천, 사무국장 이동걸, 법과대학장 신태환, 상과대학장 권오익, 음악대학장 현제명, 사범대학장 이종수, 문리과대학 교수 권중휘, 김무경, 의과대학 교수 이제구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하였다.

총장 자문 기관으로 출발한 이 위원회는 첫머리에서 언급한 스톡타드 박사의 건의서를 심의하였다. 서울대학교 종합 운영안의 효시로서 서울대학교 캠퍼스를 4개 중심으로 집중시키자는 이 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1. 서울대학교 동승동 중앙부: 본부, 중앙도서관, 문리과대학(이 중 이학부는 신공덕동으로 분리), 상과대학, 법과대학, 음악대학, 미술대학(음대와 미대는 통합), 행정대학원과 메디컬센터(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간호학과, 보건대학원 각 병원을 집중)를 둔다.
2. 수원부: 농과대학, 수의과대학을 둔다.
3. 공덕리부: 공과대학, 이과대학(대학원 이학계 포함)을 둔다.
4. 용두동 및 을지로: 사범대학과 그 부속학교를 둔다.
5. 청량리 문리과대학 이학부는 중앙공업연구소와 상호 교환한다.

이 건의서에서 제일 문제가 된 것은 문리과대학 분리 문제와 미술대학과 음악대학 통합 문제였다. 그렇지만 문리과대학을 문과대학과 이과대학으로 분리하자는 주장은 교육법 개정을 기다려야 하는 사안일 뿐만 아니라, 교육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단지 시설 문제만을 고려한 것이었다. 그리고 미술대학과 음악대학 통합 문제는 1953년(예술대학이 음악대학과 미술대학으로 분리되었던 해)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주장이었다. 이에 서울대학교는 이 문제들에 앞서 우선 메디컬센터를 조성하기 위하여 의과대학 내 음악대학 교사와 을지로 6가 약학대학 교사를 1959년 2월 17일에 서로 교환하였다. 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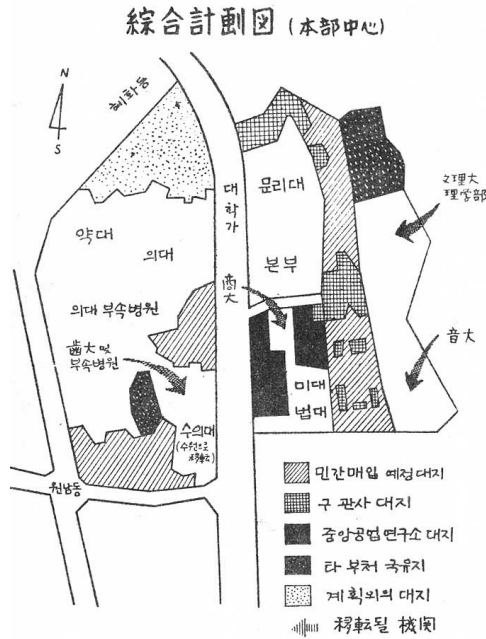
서 치과대학 교사를 매각 처분하고 그 대금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대지 부족분도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이는 결국 실현되지 못하였다.

1961년 5월에 대학본부와 각 단과대학은 1962년부터 1966년까지 5개년에 걸친 ‘종합5개년계획안’을 작성하여 문교부와 재무부 등에 제출하였다. 종합5개년계획은 동승동, 연건동, 혜화동 일대에 대학들을 집중 배치하고, 대강당과 종합 운동장을 신설한다는 건설 구상을 담았다. 주한미국경제협조처 측도 필요한 경비를 덜 의사가 있음을 시사하여 이 계획은 거의 실현되는 듯했다. 서울대학교는 낙산의 총 28,200평을 정부에서 이관받아 종합계획에 더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서울대학교 재건위원회’를 가설하여 종합 세부 계획을 논의하는 한편, 낙산 일대의 무허가 건축물을 단속하는 등 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이후 더 구체화된 종합5개년계획은 ‘동일계 대학의 동일지 집중’을 원칙으로 다음과 같이 학문별 중심지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1. 인문사회센터: 본부 문리대 법대 대학원 사법대학원 행정대학원 상대 도서관 박물관 등을 본부와 문리대 법대가 위치한 동승동을 중심으로 배치
2. 예능센터: 미대와 음대를 미술대학 중심으로 배치
3. 의치약센터: 의대 의대부속병원 생약연구소 치대 약대 보건대학원을 의과대학 중심으로 배치
4. 교육센터: 사대 교육연수원 사대부고 부중 부국을 사범대학 중심으로 배치
5. 공업센터: 공과대학 중심으로 배치
6. 농업센터: 농대 및 수의학과를 수원 의 농과대학 중심으로 배치

**그림 1-1-33** 1960년대 초 ‘종합5개년계획’에 따른 본부 중심 지역의 종합 계획도. ‘동일계 대학의 동일지 집중’ 원칙에 따라 수 의과대학을 수원의 농과대학 캠퍼스로 이전하고, 연건동에 메디컬센터를 만들기 위해 치과대학이 의과대학 구내 남측으로 들어올 예정이었으며, 종암동의 상과대학은 중앙공업연구소 자리로, 청량리의 문리과대학 이학부와 을지로 6가의 음악대학은 낙산 부지로 이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1962년 말 수의과대학이 이전해 간 자리에 미술대학이 이전하여 1963년부터 수업을 시작하였고, 치과대학은 1969년 말에 건물을 신축하여 의과대학 구내로 이전하였다.



종합5개년계획 2차년도인 1963년부터는 계획의 성과가 점차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961년 9월에 발표된 문교부의 ‘국립대학 정비 절차’에 따라 농과대학으로 병합이 결정된 수의과대학은 1962

년 12월 말에 수원으로 이전하면서 농업센터를 조성하였다. 이어 미술대학이 수의과대학 자리로 이전하고, 사범대학원이 미술대학 교사로 이전함으로써 예능센터 일부도 자리를 잡았다. 본래 미술대학 교사를 신축하려던 자금은 당시 문리과대학에 신축 중이던 이학부 교사 건축 비용으로 전용하였고, 이에 따라 청량리에 있던 이학부의 문리과대학 이전 계획도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였다. 그리고 중앙공업연구소가 이전해 갈 경우 그 자리에 상과대학을 옮겨 와 법과대학을 중심으로 한 사회과학센터를 조성하고자 하였다.

그렇지만 종합5개년계획이 서울대학교 종합화를 위한 완벽한 해법일 수는 없었다. 계획이 달성된다 하더라도 캠퍼스는 여전히 몇 군데에 분산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당시에 이미 공릉동 공과대학 일대를 중심으로 모든 캠퍼스를 집중시키자는 구체적인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모든 대학을 한곳에 모으려는 원대한 구상은 당시 단계에선 거의 바랄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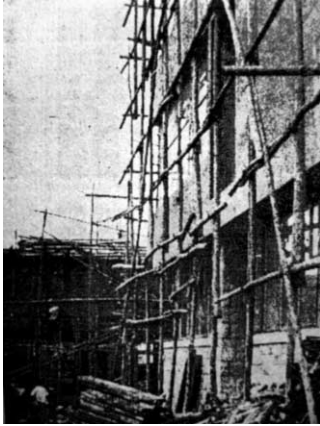
종합5개년계획에 책정된 예산 총액은 약 9억 3천여 만 원이었다. 그중 대략 62%에 해당하는 5억 7천여 만 원은 각지에 산재한 교사들 중 일부를, 즉 청량리 소재 문리과대학 의치예과, 용두동 소재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을지로의 음악대학, 남대문로의 치과대학을 매각하여 충당하고, 나머지 3억 6천여 만 원은 국고에서 보조받기로 계획하였다. 그러나 당시 국가 예산은 서울대학교의 요구대로 편성되지 않았다. 4차년도인 1965년 말까지 계획 예산의 37%만이 집행되었고, 게다가 기존 시설은 전혀 매각되지 않았다. 따라서 그때그때의 자금 수급 형편에 따라 계획을 자주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

중앙공업연구소 이전 문제도 종합5개년계획 실현을 어렵게 했다. 법과대학 내 공업연구소 대지는 본래 경성고등공업학교에 소속되었던 부지였다. 해방 후 미군정 법령 제 102호에 따라 경성고등공업학교의 재산·설비·문서·자금 및 직원 일체를 국립서울대학교에 이관하고, 이에 따라 그 관리권 또한 자동으로 국립서울대학교에 이양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서울대학교는 수차례에 걸쳐 중앙공업연구소 측에 인계를 요구하였으나, 중앙공업연구소 측은 연구소 소장이 과거 경성고등공업학교 교장을 겸직하였던 사실을 빌미로 마치 경성고등공업학교가 공업연구



그림 1-1-34 1960년대 동송동·연건동 캠퍼스 전경

그림 1-1-35 이전을 거부하고 증축 공사 중인 중앙공업연구소. 1960년대 초 종합5개년계획은 중앙공업연구소 이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실패했다.



소의 부속학교였던 것처럼 논리를 비약시켜 그 인계를 뒤로 미루었다. 5·16 쿠데타 이후 정부 측과 서울대학교는 중앙공업연구소 이전 문제로 수차례 회합을 가졌으나 쌍방의 견해차로 해결하기 어려웠다. 1963년에 들어 중앙공업연구소 측이 다시 법과대학 도서관 부근에 새로 공장을 건설하기 시작하자 이에 격분한 법과대학 학생들은 실력 행사로 공사를 중단시켰다. 이 사건을 계기로 문교부, 상공부, 내무부는 중앙공업연구소를 연차적으로 이전시키고 현 위치에 새 건물을 증축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합의를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은

1970년대까지도 실현되지 않았다.

계획에 필요한 자금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중앙공업연구소도 이전시키지 못함에 따라 종합5개년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 이후 신태환 총장은 1966년에 시작하여 1970년에 완료하는 새로운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서울대학교 캠퍼스를 인문사회센터, 의약센터, 교육센터, 공업센터, 농업센터 등 5개 센터로 통합하고, 각 센터별로 같은 계열 기구를 종합하여 단일 행정 기구를 설치하려 했다. 그렇지만 미국 유타대학교 명예 총장이자 서울대학교 발전 계획 고문이던 올핀(A. Ray Olpin) 박사는 『서울대학교 개발 계획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위 계획에 반대하였다. 그는 인문사회센터, 의약센터, 교육센터를 메인센터로 정하여 모두 세 부분으로 캠퍼스를 종합할 것을 주장하였다. 즉 공과대학과 농과대학은 제자리에 두고 나머지 단과대학은 모두 동승동과 연건동의 본부 내로 옮기자는 주장이었다.

1966년 2월 12일 정일권 국무총리 및 관계 부처장, 서울대학교 유기천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총장실에서 서울대학교 종합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하였다. 이 계획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 시기 계획들이 대체로 분산된 캠퍼스를 3곳으로 통합하자는 것이었음을 고려할 때, 이 계획 또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 자리에서 종합계획의 구체화를 위하여 '계획위원회'를 두기로 결정하였으며, 이 결정에 따라 2월 25일에 기획처를 설치하고 초대 기획처장에 김진 교수를 임명하였다.

이어 다음 달에는 서울대학교 측(총장, 기획처장, 사무국장)과 정부 측(국무총리, 총무처 장관, 경제기획원 예산국장, 문교부 고등교육국장)이 3차례(3월 3일, 3월 18일, 3월 25일) 협의회를 열었다. 여기에서 정부 측은 새로운 안들을 제시하였는데, 하나는 새

로이 건설될 남서울에 공과대학, 농과대학까지 통합한 단일 캠퍼스를 조성하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현재 공과대학 방면에 농과대학을 제외한 단일 캠퍼스를 조성하자는 것이었다.

서울대학교 측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그 부당성을 지적했다. 첫째 정부 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투자해 온 기존 시설들을 이용할 수 없어 약 22억 원의 손실이 야기될 것이고, 둘째 방대한 시설을 소유한 공과대학과 넓은 연습림을 보유한 농과대학, 메디컬 센터의 이전은 거의 불가능하며, 셋째 시일, 재산 등이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것이었다.

올핀 박사 또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정부 안에 반대하였다.

1. 경제적인 면: 현존하는 건물들이 다른 목적을 위해서는 그다지 적합하지 않다.
2. 권위적인 면: 하나의 권위를 이룩하려면 오랜 역사를 필요로 하는 바 서울대학교는 이미 현재의 캠퍼스에 찬란한 기록을 쌓아올렸다.
3. 거리적인 면: 서울대학교 현재의 캠퍼스는 다방면으로부터 이곳으로 집중되는 도로에 의하여 연결되고 있다.
4. 인구면: 대학과 상관되는 여러 가지 교육 및 연구문제는 인구가 많은 중심지에서만 실시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논의 과정을 거쳐 협의회는 결국 서울대학교에서 수립한 종합계획안이 현실적으로 가장 타당하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에 서울대학교는 1966년 5월에 1966년부터 1971년까지 6개년에 걸친 '종합6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5월 17일에 개최된 교수협의회에서 유기천 총장은 종합6개년계획 개요를 설명하였다. 이 자리에서 유기천 총장은 공과대학과 농과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캠퍼스를 모두 통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합6개년계획의 캠퍼스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메인캠퍼스(대학본부 중심-동승동 연건동): 인문사회과학계 및 의약계 기관
2. 공업캠퍼스(공과대학 중심-공릉동): 공과계 기관
3. 농업캠퍼스(농과대학 중심-수원시 서둔동): 농과계 기관

이와 같이 캠퍼스를 조성하기 위해 이화동과 삼선교 간 우회 도로를 축조하고, 연건동 및 원남동 일대 51,579m<sup>2</sup>, 이화동 일대 45,942m<sup>2</sup>, 동승동 일대 62,426m<sup>2</sup>, 도로용지

그림 1-1-36 종합6개년 계획에 따른 서울대학교 메인 캠퍼스(동승동-연건동) 배치도. 1. 본부, 2. 문리과대학, 3. 이학부, 4. 문학부, 5. 사범대학, 6. 부속 초등학교, 7. 부속중·고등학교, 8. 기숙사, 9. 법과대학, 10. 상과대학, 11. 학생회관, 12. 의과대학, 13. 보건대학원, 14. 의료도서관, 15. 외래 진료소, 16. 부속 병원, 17. 고층 병동, 18. 생약연구소, 19. 도서관, 20. 약학대학, 21. 실습약국, 22. 미술대학, 23. 음악대학, 24. 치과대학, 25. 대강당



27,561m<sup>2</sup> 등 총 187,508m<sup>2</sup>의 민간 소유지 매입을 추진하는 한편, 종합계획에 따라 관유 토지와 건물(창경초등학교 대지 3,476평 건물 1,047평, 중앙공업연구소 대지 9,100평 건물 2,691평)은 서울대학교로 이관하기로 하였다. 종합6개년계획에 필요한 총 소요 예산은 약 80억 원으로 책정하였는데, 이는 기존 시설을 매각한 재원 약 34억 7천만 원과 대일 청구권 자금 46억 원으로 충당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계획은 1967년 10월 19일 음악대학 신축 교사 기공식이 미술대학 운동장에서 거행됨에 따라 점차 실현 단계에 들어선 듯하였다. 본래 을지로 6가에 있던 음악대학을 미술대학 구내로 옮겨 예능센터를 건설한다는 취지 아래 총공사비 1억 5,376만 9,900원, 본관 4층과 별관 5층, 연건평 2,036평의 현대식 건물을 짓도록 하였다. 26일에는 치과대학 신축 교사 기공식을 의과대학 구내에서 치렀고, 같은 날에 생약연구소 기공식을 치름에 따라 메디컬센터 건설을 위한 움직임은 더욱 박차를 가하였다. 치과대학 교사는 연건평 3,000평의 지하 1층 지상 7층 건물로 총 소요 예산은 2억 2,538만 3,700원이었고, 생약연구소는 연건평 560평의 5층 건물로 전체 건설 예산액은 1억 453만 7,500원이었다. 이로써 서울대학교는 우선 공과대학과 농과대학, 사범대학, 상과대학 등 4개 단과대학을 제외한 7개 단과대학만이라도 한데 밀집시킬 수 있었다.

## 2) 관악종합캠퍼스 마스터플랜

1966년 11월에 취임한 최문환 총장은 다음 해인 1967년 11월 6일에 문교부 장관과 함께 청와대를 방문하여 서울대학교에서 마련한 새로운 계획안을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서울대학교는 이미 예산안을 책정하여 문교부에 올렸다가 당초 87억 원 규모의 예산액이 60억 원 선으로 줄어든 바 있었다. 그런데 이날 박정희 대통령은 계획안의 소규모성을 지적하고, 계획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여 서울대학교를 국제 수준의 대

학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더 큰 규모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리고 조속한 시일 내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곧 공사를 시행토록 종용하였다.

박정희 대통령 지시가 있는 후 서울대학교 대학본부 계획조사과는 다시금 이 분야 전문가들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치밀한 조사를 거듭하여 약 2개월여 만에 교육의 질적 향상과 학문 연구의 진흥, 시설 근대화를 목표로 ‘종합10개년계획안’을 수립하였다. 최문환 총장은 1968년 1월 25일에 새로이 성안된 계획안을 문교부 장관에게 설명하였고, 2월 8일에 정부여당과의 정책 협의회 자리에서 이 계획안을 설명하고 계획 실현을 위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여 결국 서울대학교 발전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받았다. 이어서 2월 23일 국회 문화공보위원회에 출석하여 이 계획안을 설명하고 원칙적인 지지와 지원을 확약받았다.

종합10개년계획은 분산된 각 기관을 다음의 세 캠퍼스로 통합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하였다.

1. 메인캠퍼스: 의약계와 농업계를 제외한 전 캠퍼스를 이전통합한다.
2. 의약캠퍼스: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의약계 기관을 통합한다.
3. 농업캠퍼스: 농과대학을 중심으로 농업캠퍼스를 조성한다.

기존 시설들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했던 기왕의 종합계획들과 달리 종합10개년계획은 의약계와 농업계를 제외한 모든 캠퍼스를 새로운 종합캠퍼스 부지로 이전 통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이전에도 새롭게 부지를 마련하여 캠퍼스를 종합하자는 안이 없지 않았지만, 무엇보다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실현하지 못하였다. 이 점에서 종합10개년계획의 성공 여부도 실상 정부의 재정 지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었다.

1968년 4월 15일에 서울대학교 종합화가 국가 정책으로 확정되었고, 같은 해 7월 19일에 이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대학교시설확충특별회계법’(법률 제 2034호)이 제정되었다. 이어서 1969년 11월 5일 대통령령 제4201호에 의거하여 ‘서울대학교시설확충특별회계법 시행령’이 공포되었다.

그런데 계획 실행을 위해서는 먼저 메인캠퍼스를 어디에 둘 것인지를 결정해야 했다. 계획의 시안에서는 먼저 ①공릉동 공과대학 주변이 검토되었으나, 이후 ②수원 농과대학 주변과 ③시흥군 안양읍 비산리도 후보 부지로 물망에 올랐다. 언론을 통해 이 계획안들이 세간에 알려지자 문흥주 문교부 장관은 현재 ①안과 ②안이 대두되고는 있으나



**그림 1-1-37** 종합10개년계획의 메인 캠퍼스 부지 확보 계획도. 빗금 표시 지역이 후보 부지인 시흥군 안양읍 비산리이다. 그러나 관악산 일대를 캠퍼스 부지로 최종 확정할 때까지 결정 사항을 여러 차례 바꾸었다.



어느 쪽으로도 결정된 바 없다고 해명하였고, 『대학신문』도 학교 당국자의 말을 빌려 ③안은 ①안과 ②안에 이은 제3의 안으로서 현재 고려 중인 또 하나의 안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문교부는 1968년 3월 25일에 ③안을 차관 회의에 올렸으나 관계 부처와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일단 보류되고 말았다.

이로부터 5개월여가 지난 8월 28일에 권오병 문교부 장관은 종합캠퍼스 부지로 태릉 일대를 확정했다고 발표하였다. 태릉 부지는 공과대학 부근의 국유 임야 45만 5천 평과 공과대학 부지 20만 6천 평 등 모두 66만 1천 평이었는데, 여기에는 <그림 1-1-38>과 같이 주로 인문사회와 이공계가 들어설 계획이었다. 문교부는 계획을 실현코자 우선 소공동의 치과대학과 청량리의 사범대학교부속중학교 등 10억 원어치의 시설 및 부지를 매각하여 건립 자금을 염출키로 하였다.

그러나 이 안에도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첫째 자연 지형이 너무 협소하다는 점과, 둘째 종합캠퍼스 부지가 육군사관학교 바로 맞은편에 있어 육사 생도가 자유분방한 서울대학교 학생들에게 위축되리라는 주장도 있었다. 반면에 이 지역이 시내와 가까워 교수와 학생이 통학하기에 편리하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역시 장점보다는 단점이 부각되었다. 결국 문교부는 1969년 1월 27일 태릉 부지 이전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새로운 터를 물색키로 결정하였다.

**그림 1-1-38** 1968년 8월, 서울대학교 종합캠퍼스 부지로 발표한 태릉 일대 조감도(계획안). 1. 천문연구소, 2. 총장회관, 3. 음악대학, 4. 학생회관, 5. 미술대학, 6. 상과대학, 7. 법과대학, 8. 연구소 9. 특수대학원, 10. 보건진료소, 11. 제2기숙사, 12. 사범대학교 부속학교, 13. 사범대학, 14. 태릉, 15. 대학본부, 16. 중앙도서관, 17. 교수회관, 18. 야외극장, 19. 육사, 20. 문리과대학, 21. 교양학부, 22. 제1기숙사, 23. 서울여대.



이후 서울대학교는 교양과정부 북쪽 땅을 종합캠퍼스 부지로 제안하였고,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자 서울시는 종합캠퍼스 건설을 감안하여 미아리와 공과대학 사이에 도로를 건설하였다. 그러나 이 지역을 모두 매입하기에는 땅값이 너무 비쌌고 땅주인도 너무 많다는 난점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당시는 1·21 사태가 발발한 후 서울 북쪽의 외곽 방위가 문제되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 안 또한 철회하였다. 또 1968년 가을부터는 신갈 일

대를 유망한 후보지로 검토하였으나 너무 멀다는 이유로 흐지부지되었다. 그리고 이 동안 부동산업자들의 투기 현상으로 인해 후보 부지 가격이 상승하게 되자 부지 선정에 더욱 신중을 기하게 되었다. 결국 종합캠퍼스 부지를 최종 결정한 것은 종합10개년계획이 성안되고 2년 뒤인 1970년의 일이었다.

1969년 11월 초를 즈음하여 박정희 대통령과 홍종철 문교부 장관, 최문환 총장 등은 관악골프장을 남몰래 답사하기 시작하였다. 박정희 대통령은 일전에 우연히 관악골프장을 지나가다 골프장으로 쓰기에는 아까운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때마침 서울대학교 종합캠퍼스 부지로 적당한 곳이 없다는 보고를 듣고는 이 곳을 후보지로 고려했다고 한다. 결국 종합캠퍼스 부지는 1970년 2월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관악산 기슭으로 최종 결정되었고, 이는 다음달 16일에 정부 성명으로 공식 발표되었다. 이날 박정희 대통령은 최문환 총장에게 ‘한강을 굽어 보는 언덕에 문화의 유산을 이어받을 사랑스러운 아들딸들에게 진리 탐구의 전당을 마련해 주고자 한다’는 요지의 친서를 보내면서 앞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다. 최문환 총장은 또한 종합화 계획을 위한 부지가 확정됨으로써 서울대가 ‘민족 문화의 발전적 계승자로서뿐 아니라 인류 문명의 창조자로서 기능할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고 하였다.

관악산 기슭을 종합캠퍼스 부지로 선정하게 된 동기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였다.

1. 서울시 중심부로부터 15km 이내에 위치하고 있다.
2. 부지가 한강 남쪽에 있어서 한수 이남을 개발하려는 정부방침과 일치한다.
3. 관악부지는 학교시설지구가 약 350만m<sup>2</sup>(875에이커, 107만평)이고 인근에 농과대학 연습림(514만평)과 인접하고 있어 광범위한 활동영역을 보유하고 있다.
4. 이 부지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이곳은 이미 강남 토지 붐이 일어나기 전부터 평당 7~8천 원 이상을 호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자금을 들여 골프장을 건설한 동서관광주식회사는 쉽게 땅을 내놓으려 하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부지 매입에 성공할 수 있었던 데에는 골프족의 향락보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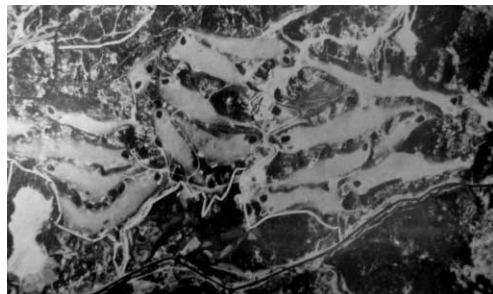


그림 1-1-39 골프장이 있던 관악산 종합캠퍼스 부지

대학촌 건설이 중요하다는 대통령 권유가 크게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종합화 계획은 종합캠퍼스 부지 결정을 계기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1968년 7월 25일에 첫 모임을 가진 ‘서울대학교 교육연구 및 기구조직분과위원회’는 이후 연말까지 여러 차례 회합을 거듭하며 종합10개년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 문제들을 토의하였다. 위원회에서 제출한 보고서는 3월 30일자 『대학신문』을 통해 공표되었는데, 보고서는 종합화에 따른 발전 계획의 기본 방향을 구상하는 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전제를 두었다. 첫째 필요에 따라 관련 법령까지도 개정할 것, 둘째 분산된 단과대학 중 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부속 병원은 메디컬센터로 통합하고 농과대학과 공과대학은 현존하는 대로 두되 공과대학의 경우 궁극적으로 새 교지에 종합화한다는 것이었다.

이후 4월 8일에는 종합10개년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서울대학교설치령’이 대통령령 제4870호로 공포되었고, 5월 5일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심의 기구인 ‘서울대학교종합계획추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서울대학교설치령 제22조에 따라 총장 자문기관으로 ‘기획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이 위원회 산하에는 ‘교육연구 및 기구조직계획(Academic Plan)’을 입안하기 위한 ‘교육연구 및 기구조직분과위원회’와 ‘캠퍼스종합건설계획(Master Plan)’을 수립하기 위한 ‘시설분과위원회’를 두었다.

1970년 4월 8일에는 캠퍼스종합건설 계획(이하 마스터플랜)의 추진체로서 ‘서울대학교 건설본부’를 교내에 신설하였고, 같은 달 15일에는 건설본부장으로 이훈섭 철도청장을 임명하였다. 건설본부는 먼저 마스터플랜의 조기 작성을 위하여 여러 가지 예비 조사를 시행하였다. 여기에는 국내 여러 대학의 시설 현황 조사, 지형 측량 및 분석, 토질 시험, 홍수량 조사 및 연구, 우수 배제(雨水排除) 및 하수 처리 연구와 조경용 식수 조사 등을 포함하였다.

한편 ‘교육연구 및 기구조직분과위원회’는 1970년 10월 12일에 제1차 보고서를 완성하여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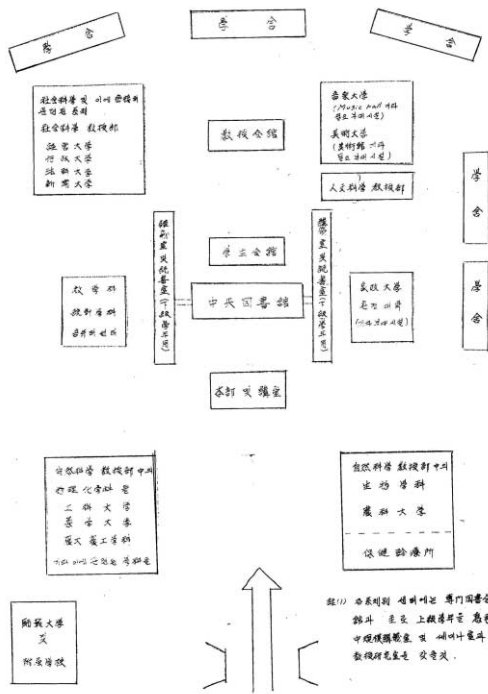


그림 1-1-40 ‘교육연구 및 기구조직분과위원회’ 제1차 보고서에 수록된 캠퍼스 배치도. 캠퍼스 중앙에 중앙도서관과 학생회관을, 주변에 학문 계열별 중심 지역을 배치하였다. 그러나 이 구상은 너무 이상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앞으로 서울대학교가 지향하게 될 교육 이념을 규명하고, 그 교육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가장 이상적이라 생각되는 대학 모형을 창조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보고서에서 캠퍼스 배치를 위한 기본 구상을 보면(그림 1-1-40), 먼저 캠퍼스를 학문 계열에 따라 몇 개 센터로 구분하였고, 중앙도서관과 학생회관은 교내 생활의 중심인 만큼 되도록 캠퍼스 중심에 배치할 것을 권하였다. 또 각 건물은 지나치게 크거나 동일한 형태를 피하도록 하고, 학문 계열의 성격을 부각시키면서도 자연 조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교육연구 및 기구조직계획(이하 아카데미플랜)이 구체화됨에 따라 이제 그 구상을 공간에 구현할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했다. 이 작업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응용과학연구소에서 맡아 추진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안, 곧 관악산 토지 이용 방안과 아카데미플랜 수용 방안, 서울대학교 중심의 지식 산업 공동체의 형성 방안이 주된 토론 대상이 되었다. 특히 세 번째 사안인 대학 도시화 계획은 케임브리지나 옥스퍼드 등의 대학 타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대학의 지적 자원을 사회에서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리곤밸리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

응용과학연구소가 설계한 새로운 종합캠퍼스는 중앙도서관과 학생회관, 교수회관을 캠퍼스 중앙에 배치하고, 내부에는 인문, 사회, 자연 등 기본 학문 분야를, 외곽에는 전문 계열을 배치한 구상안이었다. 이는 아카데미플랜을 거의 그대로 공간화한 것이었다. 또한 아카데미플랜에서 제시한 대로 대학 인구는 2만 명으로 한정하였는데, 이 인원을 골프장 18홀과 그 언저리 20만 평에 모두 수용할 수 있다고 보고, 나머지 80만 평은 주변 녹지로 남겨 둔 자연 속 캠퍼스를 구상했다. 캠퍼스가 수용 능력을 초과하면 주변 녹지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80만 평의 분계 영역을 뚫고 바깥으로 성장해 가도록 하였다. 그리고 차는 20만 평을 둘러싼 순환 도로로만 다니고 순환 도로 내부에서는 걸어 다니게 하였다.

건설본부는 응용과학연구소의 마스터플랜에 의거하여 전체적인 재정 규모를 추정하고 단계별 건설 계획을 작성하여 제3차 경제개발5개년계획과 1971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하였다. 그리고 마스터플랜에 따라 캠퍼스 진입 도로와 순환 도로 위치를 결정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그림 1-1-41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응용과학연구소의 「서울대학교 종합캠퍼스 계획 수립 보고서」(1970년)

〈표 1-1-1〉 종합캠퍼스 마스터플랜 공동 작업 분담표

작업 구분	작업 조직	
		본부장
총괄	DOBER, UPTON	김응세, 김명집
스페이스 프로그램	OWEN	임충신, 손승요, 이규목 외 7명
수도권 분석	LIDSKY	김형만 외 4명
주변 지역 분석	LIDSKY	김형만 외 5명
부지 분석	FURLONG	이창민 외 7명
도면화 작업	FURLONG, STAUFFER	손승요 외 9명
공법 및 설계 기준	ROWAN, PADDOCK	신국별 외 2명
배치 계획	STAUFFER, FURLONG	신국별, 이창민 외 2명
조경 계획	HANDWERGER	정창각, 강우창 외 5명
토목 계획		김정림 외 6명
설비 계획		이홍남 외 4명
지원 행정	JENNINGS	김영수, 이만호 외 1명

착수하였다. 건설본부는 이 과정에서 아세아재단 후원으로 미국의 DPUA(Dober, Paddock, Upton and Associates) 캠퍼스용역단의 자문을 얻어 최종적인 마스터플랜 작업을 진행하였다. 스페이스 프로그램, 수도권 분석, 주변 지역 분석, 부지 분석, 기본 배치 설계, 공법 및 설계 기준, 그리고 도면화 작업 순으로 마스터플랜 작업을 구분하였고, 각 작업은 서울대학교 건설본부 요원과 외국인 캠퍼스용역단 직원이 한 팀이 되어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구체적인 작업 구분과 작업 요원 조직 및 진행 체계는 〈표 1-1-1〉과 같다.

이러한 작업 방식은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었다. 곧 외국인 캠퍼스용역단이 서울에 체재하면서 자문 활동 시간과 경비를 최소로 줄이고, 그들에게서 캠퍼스 건설계획 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동원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인 전문가들 중 몇몇 사람은 이러한 계획 과정 전체를 경험함으로써 후에 그 경험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공동 작업 과정에서 상호간 시각 차이도 있었다. DPUA는 응용과학연구소가 작성한 기존의 마스터플랜을 검토한 후 주관적인 해석으로 몽상적인 설계를 했다고 비판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제반 사항을 철저히 분석하는 작업부터 시작하였는데, 이를 통해 설계 과정이 투명해진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방대한 분석 결과

가 들인 노력에 비해 크게 활용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분석이 설계와 전혀 무관하게 진행되었다.

결과적으로 외국인 캠퍼스용역단의 참여는 기존 계획을 적지 않게 변경시켰다. 응용과학연구소의 마스터플랜은 고층 고밀도를 지향하여 캠퍼스의 상당 부분을 자연 그대로 두는 안이었다. 반면에 DPUA의 안은 저층 고밀도를 기초로 하였다. 이에 따라 건물은 옆으로 길게 늘어지게 되었고, 차량은 순환 도로 내부로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아카데미플랜도 처음 계획과 달리 학문 계열별로 완전히 통합하지 못하고, 기존 단과대학들이 자체 형태를 유지한 부분 통합 수준으로 매듭지어졌다. 따라서 아카데미플랜과 마스터플랜 사이에 혼선이 일어나게 되었다. 게다가 어떻게 80만 평을 녹지로 남겨 둔 채 제2, 제3의 캠퍼스를 만들 것이며, 어떻게 대학과 주변 도시를 아울러 대학촌을 형성할 것인가의 문제는 캠퍼스 건설 일정에 쫓겨 관심조차 받지 못하였다.

서울대학교는 1971년 10월 12일에 최종적인 마스터플랜 내용을 발표하였다. 이후 청문회를 거쳐 12월 30일에 대통령과 국무총리에게 보고함으로써 이 안을 확정하였다. 확정된 마스터플랜의 시설물 배치 개념은 간단하였다. <그림 1-1-42>에서 볼 수 있듯이 캠퍼스 중심에 중앙도서관을 두고 대학본부를 도서관과 동일 축에 배치하여 주변의 학생회관과 함께 중심 지구를 형성토록 하였다. 대학의 핵과 같은 이 지역은 캠퍼스 관문으로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강당, 소극장, 박물관, 체육관 등 대학 인구는 물론 일반인까지도 사용 가능한 특수 건물들과 인접해 있었다. 또한 중심 지구를 사이에 두고 교육 지구를 양쪽으로 구분하여 배치하였는데, 왼쪽에는 인문·사회계를, 오른쪽에는 이공계를 배치하였으며, 음악과 미술 등을 위한 교육 시설은 주 건물군 사이에 배치하였다. 학생 기숙사와 교수 아파트로 구성된 주거 지역은 낙성대와 이어지는 캠퍼스 북동쪽에 배치하였고, 지역 사회와 인접한 캠퍼스 북단에는 종합운동장, 파워플랜트, 영선 공장, 창고 등을 배치하여 캠퍼스와 일반 사회의 완충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이훈섭 건설본부장은 마스터플랜을 확정 발표하는 자리에서 1973년도에는 인문사회계가, 1974년도엔 이공 예능계가 관악 캠퍼스로 이전할 것이며, 1975년까지는 모든 교육 시설을 건축하고 1977년까지 부대시설을 완공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서울대학교 종합화는 이제 계획 단계를 넘어 실현 단계에 들어서게 되었다.

그림 1-1-42 최종 결정한 종합캠퍼스 마스터플랜의 캠퍼스 배치도(그림의 왼쪽이 북쪽이다). 캠퍼스 중심에 중앙도서관, 학생회관, 대학본부를 배치하고, 왼쪽에 인문사회관을, 오른쪽에 자연공학관을 배치하여 캠퍼스 어느 곳에서든 중심 지역에 쉽게 이를 수 있도록 하였다.



### 3) 종합캠퍼스의 건설과 이전

1971년 4월 2일 서울대학교 종합화의 구체적인 실현을 알리는 서울대학교 종합캠퍼스 기공식을 관악산 부지에서 성대하게 치렀다. 오후 2시에 음악대학 합창단의 축하로 시작한 이날 행사는 국기 배례, 국민 교육 현장 낭독, 총장 식사, 학생 대표 축시 낭독, 대통령 치사, 대통령 발파 스위치 점화 등의 순으로 진행하였다. 한심석 총장은 식사에서 '현대를 창조할 과제와 현대의 고민을 해결해야 할 과제를 함께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할 때 서울대학교의 종합화는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으며, 박정희 대통령도 치사를 통해 '오늘 새로운 터전을 잡는 서울대학교가 앞으로 세계적 대학으로 그 권위를 높여 인격과 지식을 함께 갖춘 국가의 동량을 길러내고 민족의 이상과 꿈을 구현하는 통일과 중흥의 등불이 되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사범대학 부속여자중학교 학생들의 화려한 경축 마스게임을 끝으로 30여 분만에 막을 내린 이날 행사에는 교수와 학생, 내외 귀빈, 국내 보도진, 음악대학 합창단 및 관현악단, 4천여 명의 주민 등 모두 7천여 명 정도가 참가하였다.

이날부터 댐 축조 공사, 외곽 도로, 대지 정지 공사, 인문·사회계 교사 기초 공사, 배수 시설 공사, 관통 도로 건설 등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었다. 그렇지만 기공식 하루



그림 1-1-43 1971년 4월 2일 서울대학교 종합캠퍼스 기공식

전날인 4월 1일에서야 일단의 건설 계획이 발표되었다는 사실은 난센스에 가까웠다. 기공식 안내책자에 실린 종합캠퍼스 구상도는 최종 확정된 마스터플랜이 아니라 응용과학연구소에서 수립한 1차 마스터플랜에 기반한 것이었다.

건축 착공식은 종합캠퍼스 기공식이 있는 지 약 1년여 뒤인 1972년 7월 20일에 거행되었다. 이날은 한심석 총장과 각 단과대학 학장, 교직원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 측에서는 서울대학교 종합계획 추진위원장인 김종필 국무총리와 민관식 문교부 장관이 참석했다. 이때까지 건설 현황을 보면 관통 도로와 순환 도로 2차를 46%, 우수 배수로를 81%, 부지를 80% 시공하였으며, 상하수도과 오수 처리장 공동구 공사를 7월부터 시작하였다.

건축 공사는 인문관, 사회관, 교육관, 물리관, 화학관, 생물관 등의 골조 공사부터 시작하여, 파워플랜트와 도서관, 대학본부, 학생회관에 대한 골조 공사를 진행하였다. 시공에 필요한 기본 설계는 응용과학연구소에서 이미 완성하였고, 건축 설계는 한국종합기술공사 외 여덟 회사에서 담당하였으며, 토목과 설비는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외 다섯 회사에서 담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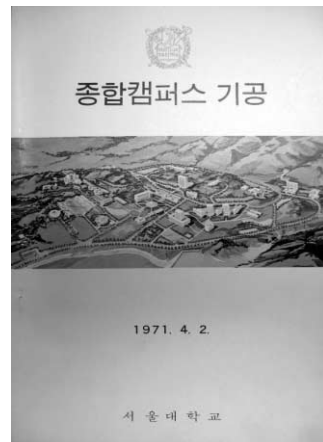


그림 1-1-44 종합캠퍼스 기공식 안내 팸플릿 「종합캠퍼스 기공」(1971년)



그림 1-1-45 종합캠퍼스 조성시 건설하였던 인문대학 건물 처마. 전통적 요소를 가미한다는 종합캠퍼스 건축 설계 취지를 잘 드러낸 대표적 사례로 손꼽힌다.



건축 설계에서 누차 강조된 점 중 하나가 전통과 현대의 조화였는데, 사실 당시 이 주제는 서울대학교 마스터플랜에서만 두드러진 것은 아니었다. 그 대표적인 예로 1966년에 발표된 국립종합박물관 설계를 들 수 있는데, 설계 공모를 할 때 설계 조건 제5항에는 ‘건물의 외형은 한식(韓式)으로 …… 어떤 문화재건축을 모방하여도 좋음 …… 단, 내부 시설은 한식을 가미한 초현대식 시설로 한다’ 라고 되어 있었다.(空間社, 『공간』 2월호, 12쪽) 그러나 이 원칙에 따라 공모 당선되어 결국 건축

되기에 이른 국립종합박물관(현 경복궁 내 국립민속박물관)은 한국 건축의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논할 때마다 최악의 사례로 거론되어 왔다. 이후 공공 건축물을 설계 공모할 때마다 ‘전통의 현대화’가 변함없이 과제로 제시되었으나, 또 그때마다 한국 현대 건축가가 전통 구현에서 무능함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반복되었다. 아래에 서울대학교 마스터플랜에서 제시한 구체적인 건축 설계 기준 중 몇 가지만 예시해 둔다.

1. 경사로, 계단, 옹벽, 배수구, 기단 등과 같은 구성요소들은 뚜렷하고 명확한 위치에 배치되어 있다. 덕수궁, 창덕궁, 비원 등의 연못 주위와, 경주의 불국사 등에서 특히 분명하게 볼 수 있다. 옛날의 건축가들은 이러한 우리나라 고유의 양식을 다루는 방법을 발전시켰으며, 이런 감각은 관악산의 심한 경사지에 적용하는 데 많은 이점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2. 또 하나의 전통적 개념은 건물군에 의하여 외부공간을 설정했다는 것과, 공간 내에 혹은 외부공간 속에 돌출하여 구조체들을 사려깊게 배치함으로써 어느 특별한 건물을 강조하거나 또는 그 공간에 시각적인 방향감각을 주었다는 것이다. 가장 전형적인 감각을 완전히 둘러싸인 공간에 자리잡고 있는 경복궁의 근정전, 혹은 공간 속에 돌출되어 있는 창덕궁의 내정에서 우리는 느낄 수 있다.
6.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건물은 지붕선이 또한 뛰어나게 나타나 있다. 벽체 밖으로 튀어나온 서까래와 흰 모서리 및 처마는 전체의 건물형태에 물결치는 듯한 우아한 효과를 주고 있다. 전통적인 건축에서는 지붕형태가 중요한 특징이므로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을 필요로 할 것이나 외부공간으로 튀어나와 강한 인상을 주며 또한 비례가 좋은 처마돌림 등은 종합캠퍼스 건물에서도 어느 정도 활용이 가능한 설계요소이다.

그렇지만 건설 공법을 선택하는 데는 한국적인 것보다 경제적인 요소를 더 많이 고려하였다. 마스터플랜은 종합캠퍼스 제1단계 건설 공사시 많은 건물에 적용한 바 있는 전형적인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당시 국내 건물은 대부분 철근 콘크리트 공법으로 건설하였다.

이러한 건설 공법을 채택할 경우 이제 남는 문제는 공사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 여부였다. 콘크리트 골조 위에 슬라브를 놓고 벽돌을 쌓는 방법은 기술 면에서 간단하고, 특히 종합캠퍼스에 짓고자 하는 저층 건물의 경우에는 더욱 용이하였다. 또 건설 량에서도 종합캠퍼스 제1단계는 당시 건설 중이던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약 두 배 면적으로, 국내 총 건설량의 1%를 넘지 않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마스터플랜은 우리 나라의 건설 수준으로 볼 때 종합캠퍼스에서 요구하는 어떠한 건물도 충분히 건설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건설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해 당초 1973년 9월 이전 계획을 1974년 3월 이전으로 연기 변경하였으며, 이후에도 공사가 계속 지연됨에 따라 또다시 일정을 늦추었다. 1974년 초 도서관은 6층 중 2층만 준공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부 집기도 마련되지 않아 이용이 불가능하였다. 학생회관 역시 5층 중 3층만 건축되었다. 이처럼 공사 중인 캠퍼스는 학문 활동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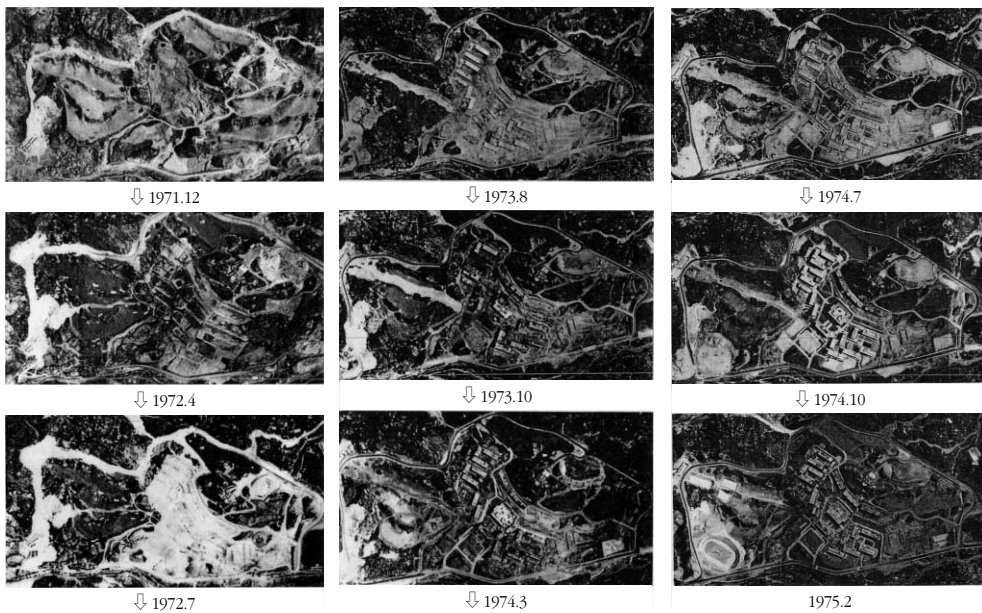


그림 1-1-46 관악 캠퍼스 부지와 주변 환경의 변천 과정(1971년 12월~1975년 2월)

1단계 이전이 1975년으로 연기된 가운데 1974년 3월 30일에 1단계 건설 공사가 완성되었다. 2단계 공사는 1974년 4월에 착공하여 1975년에 완공하였는데, 약학관, 환경가정관, ROTC관, 예능관, IMC관을 건설하였고, 1977년 이후에 시작된 3단계 공사는 서울대학교 종합화 계획을 완료하는 것으로 공학관, 대강당, 박물관, 기숙사, 실내 체육관 등의 건설 계획을 포함하였다. 관악 캠퍼스 건설 공사 현황을 단계별로 정리하면 <표 1-1-2>와 같다.

관악 캠퍼스 건설은 계획상 1977년에 완공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소요 예산 증가에 따른 경비 조달 문제 때문에 건설 기간이 예정보다 3년 지연되었다. 특히 종합화 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마련한 ‘서울대학교시설확충특별회계법’의 시효가 1977년에 소멸함에 따라 3단계 건설 공사는 매우 더디게 이루어졌다. 그 결과 3단계 건설 공사로 예정된 대강당은 문화관으로 이름을 바꾸어 1980년에서야 공사에 착수, 5년 만인 1985년에 완공하였고, 실내 체육관은 1986년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1984년부터 공사에 착수하여 1986년에 완공하였다. 박물관은 건물이 없어 도서관 6층에 자리할 수밖에 없었고, 그나마 1984년부터 박물관 신축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제대로 진척되지 않아 1992년에 가서야 마칠 수 있었다.

1975년도 1학기 개강을 앞두고 시행한 1단계 이전 대상 기관은 대학본부를 비롯하여 대학원,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신문대학원, 행정대학원, 문리과대학, 법과대학, 사범대학, 상과대학, 가정대학, 교양과정부, 도서관, 박물관, 법학연구소를 비롯한 본부 산하 연구소 6곳 등 모두 20개 기관에 이르렀으며, 이전 기관의 인원은 학생 10,843명, 교수 633명, 직원 385명으로 총 11,861명에 달하였다. 그런데 이전 기관 중 문리대, 상대, 교양과정부는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경영대학 등으로 그 형태가 바뀌게 되었으므로, 이와 같은 변화를 반영한다면 이전 기관은 총 26개 기관이 된다.

종합화 및 캠퍼스 이전의 총 산과역을 맡았던 기획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이 기관들의 이전 대상 물품의 총 중량은 줄잡아 2만여 톤, 3톤 트럭으로 7천여 대분에 해당하였다. 규모가 이와 같았던 까닭에 1단계 이전 비용만 8천만 원에 육박하였다. 경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포장비로서 4,500여 만 원에 이르며, 그 다음이 차량비로서 1,270여 만 원이었다.

도서관과 박물관은 이전 과정에 어려움이 많았다. 도서관의 경우 옮겨야 할 물품은 집기를 제외하고도 규장각 도서 14만 권을 포함하여 총 70여 만 권에 달했다. 책을 담은 종이 상자만도 2만여 개로 보통 트럭 100여 대분이었다. 그리하여 도서관은 일찍이 대

〈표 1-1-2〉 종합캠퍼스 단계별 건설 공사 현황

사업명	대상 기관 또는 시설 내용	비고
<b>1단계 시설 공사(1971~1974년)</b>		
인문·사회관(12개동)	대학원, 행정대학원, 인문대학, 사회대학, 법학대학, 경영대학, 사범대학	1975년 2월 이전 완료
자연과학관(7개동)	자연과학대학	"
도서관	열람석: 4,000석, 서가: 150만 권	"
학생회관	학생 자치 활동 시설, 식당, 보건진료소	1975년 건설 완료
본부	대학행정실, 컴퓨터센터	"
파워플랜트	각종 열원, 전원의 공급	"
간이 체육관, 온실	간이 체육 시설, 식물 재배	"
기숙사	총 3,200명 계획 중 700명 완성	1975년 8월 입사 완료
종합운동장	필드 조성, 30,000명 수용 규모	1975년 건설 완료
<b>2단계 시설 공사(1974~1975년)</b>		
약학관	약학대학	1975년 8월 이전 완료
환경가정관	환경대학원, 가정대학	"
ROTC관		"
예능관	미술대학, 음악대학	1975년 12월 완공
IMC관	종합 시청각 교육관	"
<b>3단계 시설 공사(1976년 이후)</b>		
대강당	문화관으로 개명	1985년 완공
박물관		1984년 착공, 1992년 완공
공학관	공과대학	1980년 2월 완공
실내 체육관		1986년 완공

출을 중단시키고 열람과만 40여 명의 인부를 별도로 고용하여 직원 30여 명 등 70여 명이 작업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박물관은 당시 소장품 6,200만 점을 포장하였는데, 소장 물의 훼손을 우려하여 막인부를 고용하지 못하고 직원 7~8명이 일일이 포장하여 이전 하였다.

한편 서울대학교는 캠퍼스 이전에 대비하여 종합캠퍼스 동북쪽 부속학교 부지(현재의 관악사 일대) 뒤쪽에 지방 학생을 위해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2층짜리 기숙사를 마련하였으며, 통학생 편의를 위하여 전철 노량진역에서 캠퍼스 정문까지 왕래하는 스쿨 버스를 11대 마련하였다.

1975년 1월 20일, 드디어 관악 캠퍼스로의 대규모 이주가 시작되었다. 첫 이삿짐은

그림 1-1-47 1975년 1월 20일, 관악 종합캠퍼스로 이전을 위해 동송동 캠퍼스 교문을 나서는 수송 차량



대한통운 트럭에 이훈섭 건설본부장, 이만갑 부속도서관장 등이 동승하여 오후 1시에 교문을 나섰다. 교정에는 이전 소식을 들은 교직원, 학생, 주민 등 100여 명이 모여 첫 출발하는 차에 손을 흔들고 박수를 보내 주었다. 이때부터 다음 달 2월 28일에 1차 이사가 완료될 때까지 거의 한 달여 동안 이삿짐을 실은 트럭들은 끊임없이 서울대학교 정문을 떠나 갔다.

트럭들은 끊임없이 서울대학교 정문을 떠나 갔다.

서울대학교 이전은 단지 서울대학교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서울대학교가 관악 캠퍼스로 이전하면서 대학 주변의 하숙집, 다방, 식당 등의 이전도 뒤따랐다. 문리과대학 앞 학림다방, 대학다방과 중국집 진아춘(進雅春) 등은 벌써부터 이사를 서둘렀다. 그런데 이 거대한 이사군(群)에 동대문경찰서 학원 담당 경찰관들도 포함되었다. 동대문경찰서의 '베테랑' 급 학원 담당 경찰관 7명이 남부경찰서로 전근하였다. 이 중에는 18년 동안 서울대학교만을 담당하여 학내에서는 '박사' 라고 불리던 모(某) 주임도 있었는데, 그는 이전 후 앞으로 학생 운동은 성명전이 많게 될 것이라고 논평까지 하였다고 한다. 이는 당시 시대상이 낳은 진풍경이었다.

이사가 한창 진행되는 한편에선 지금까지의 삶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기 위한 모임들이 이어졌다. 서울대학교 종합화 계획에 따라 인문대학, 사회대학, 자연과학대학으로 세분하게 된 문리과대학의 해체식이 2월 18일에 서울시 종로구 서린호텔 연회실에서 유기춘 문교부 장관, 서명원 부총장, 박준규 동창회장을 비롯한 교수 및 동창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해영 문리과대학장은 '30여 년 간 몸담아 온 문리대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니 무척 서운하지만 발전적 해체라고 생각할 때 위로가 된다' 고 하였다. 또 문리대학장을 지낸 이희승 박사는 '문리대가 진정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제도 뿐만 아니고 학문의 자유가 선행되어야 할 것 같다' 고 말했다.

이사가 완료된 28일 오후 4시에는 서울대학교 현판을 뜯는 철수식을 거행하였다. 이에 앞서 서울대학교는 이미 졸업식을 치른 26일부터 증명서 발급 등의 일체 학사 사무를 중단하고 28일 오전에는 학적부 등 문서를 관악 캠퍼스로 옮겼다. 현판 철수식 자리에서 한심석 총장은 각 단과대학 학장들과 함께 정문 대리석 현판을 떼어 냈고, 이를 지켜보던 교수들과 학생들은 박수를 보냈다.

이와 비슷한 시간에 문리과대학 학생들은 4·19기념탑 앞에서 굿으로 고별식을 대신했다. 이 굿판에서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 왔다는 고사떡과 술을 제물로 바쳤으며 참석 학생들은 캠퍼스를 떠나는 감정을 고사로 달랬다. 이들은 고사를 지내면서 ‘문리대 귀신 따라와라, 도서관 귀신 따라와라’라고 주문을 외웠고, ‘관악산 관상을 보니 신수 흰하구나’라고 점괘를 풀기도 하였다.



그림 1-1-48 1975년 2월 28일, 관악 종합캠퍼스로 이사를 마친 후 동숭동 캠퍼스 현판을 떼는 모습.

동숭동 캠퍼스의 문리과대학 현판은 일주일 늦은 3월 7일에 내려졌으며, 이날 각 연구실에 남아 있던 조교들과 학생들은 소주를 뿌리면서 ‘고시레 고시레’ 하고 옛 캠퍼스에 대한 예우를 다했다. 각 대학과 기관도 여러 가지 일화를 남기면서 이전하였으며, 정의의 종과 4·19탑도 함께 옮겼다.

중요 시설과 물자는 대개 2월 말까지 옮겼으나 이후로도 소규모 이전 작업은 계속되어 1975학년도 1학기 동안 각종 물자 운반이 끊이지 않았다. 그 해 8월 약학대학이 이전하고, 다음 해 2월 미술대학과 음악대학이 이전하여, 1976년까지 공과대학과 농과대학, 의과대학, 치과대학, 보건대학원, 수의과대학을 제외한 전 대학과 기관이 이전하였다. 그리고 1979년부터 시작하여 1980년 2월까지 4단계로 나누어 실시한 공과대학 이전은 종합화 계획의 실질적인 완성이라는 의미를 지녔다.

그렇지만 서울대학교 종합화 문제는 결코 캠퍼스 이전과 같이 물리적 또는 지리적 이동으로 끝날 수 없었다. 이상의 작업은 종합화 계획의 일부인 물리적 여건 조성에 불과하였다. 종합화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서는 앞으로 화학적 조화를 실현해야 했다.

#### 4) 남겨진 공간

각 대학의 관악 캠퍼스 이전은 옛 캠퍼스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낳았다. 새로운 종합캠퍼스 건설에 소요되는 자금은 총 261억 원(1971년도 불변 가격)으로 이 중 50%는 자체 재산 매각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정부의 일반 회계에서 보조를 받아 마련해야 했다. 그러므로 서울대학교 측에서는 종합캠퍼스 건설의 재원 확보를 위해

1973년도 예산 중 53억 2,200만 원을 자체 재산 매각으로 채워야 했으나, 미술대학과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를 처분하여 6억 9,000만 원을 확보했을 뿐이었다.

서울대학교는 그 동안 관계 기관을 통해 몇몇 대학과 교섭을 벌이기도 했으나 원매자가 없던 까닭에 문리과대학과 사범대학, 음악대학 등 세 개 대학 캠퍼스 매각을 국세청에 의뢰하게 되었다. 한편 문교부와 서울대건립추진위원회로부터 구입 건의를 받은 주택공사는 문리과대학과 사범대학 자리 41,000여 평을 매입, 1974년 말까지 아파트 3천 가구분을 건립하여 일반에 분양하는 계획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두 차례의 공매 입찰이 유찰됨에 따라 이 건물과 대지는 당초 예정대로 주택공사에 팔리게 되었다.

주택공사는 1973년 9월 3일 문리과대학과 사범대학 부지에 세울 아파트 청사진을 발표하였다. 주택공사는 문리과대학 부지에 730~850가구가 입주할 15층 아파트 6동과 980가구가 입주할 5층 아파트 20동을 74년 3월에 착공, 1975년 8월에 완공할 예정이었다. 문리과대학 부지에 세워질 아파트는 40평, 60평, 80평 크기의 고급 아파트로서 분양 가격은 규모에 따라 1000~2000만 원선이었다. 주택공사는 문리과대학과 사범대학 부지를 매입하기로 결정하면서 대학본부, 문리과대학, 박물관 등의 건물은 원형 그대로 보존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는데, 청사진에 나타난 원형 보존 계획이란 대학본부는 아파트 관리 사무소로, 중앙도서관은 슈퍼마켓으로 전용하는 것이었다. 또 문리과대학 운동장에 대규모 수영장과 주차장, 녹지대 등을 지을 계획이었다. 한편 사범대학 부지는 용두동에 지하철 터미널이 입주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비교적 규모가 작은 22평형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었다.

남겨진 캠퍼스들의 건물 및 부지 활용 방안과 관련하여 그간 논의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진행되었다. 첫째가 캠퍼스를 허물고 그 자리에 아파트를 건설하자는 아파트 건설론이고, 둘째가 캠퍼스를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는 현상 보존론이며, 셋째가

의과대학 등에 의한 인수 활용론이었다.

정부가 아파트 건설론을 구체화해 가는 상황에서 여론은 이에 찬성하기보다는 적극 반대하였다.

광범위한 반대 여론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주택공사의 아파트 건립 계획이 공사 설립 취지나 사회 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이었다. 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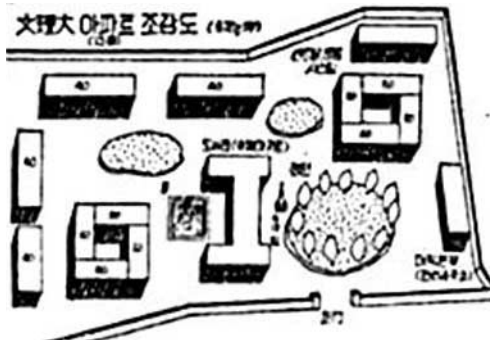


그림 1-1-49 1973년 9월 3일 주택공사에서 발표한 '문리대 아파트 조감도'. 오른쪽 아래 본부 건물은 아파트 관리 사무소로, 가운데 도서관 건물은 슈퍼마켓으로 전용될 계획이었다.

국민 세금으로 투자 설립한 주택공사가 장삿속으로 초호화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은 주택공사의 설립 취지와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 사이의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것이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반대여론에 직면하여 대처 방안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었다. 건설부는 1973년 9월 18일 주택공사에 대해 아파트 평형을 최고 60평형 이하로 지으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이를 뒤 박정희 대통령은 장예준 건설부 장관에게 주택공사가 건축하는 주택 및 아파트는 일반 서민용 주택에 중점을 두고 호화 아파트는 건축하지 말라고 지시하였다. 그리고 주택공사는 복지를 우선시해야 하므로 주택공사가 건립하는 주택은 40평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음으로써 건설부보다 더 상한을 낮추었다. 같은 날 장예준 건설부 장관은 주택공사가 매입한 문리과대학 부지에는 30평, 40평형 아파트 1,200가구분을, 사범대학 부지에는 22평형 840가구분을 1974년 4월부터 건설, 분양기로 확정했다고 발표하였다.

한편 현상 유지론은 대체로 대학 교육의 발상지로서 동숭동 캠퍼스의 역사적 가치를 인정하여 구 캠퍼스를 있는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는 논리에 근거하였다. 서울대학교 교수 및 학생은 구 캠퍼스의 매각 발표 직후부터 적어도 문리과대학 건물만은 매각을 중지하고 그대로 보존 활용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물론 일부에서 대학의 사명과 국가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구 캠퍼스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제기하였고, 동숭동 캠퍼스는 그 연원이 일제 식민지기의 경성제국대학까지 올라가는 까닭에 캠퍼스 부지 활용은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 것이라고도 하였다. 이에 대해 현상 유지론에서는 동숭동 캠퍼스를 헐어 버리는 것은 오욕의 한 페이지를 지워 버리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으나, 새 것은 언제나 묵은 것 위에서만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단은 일찍이 문리과대학을 의과대학이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한심석 총장에게 건의한 바 있었다. 당시 의과대학은 74년 말 완공 계획으로 83억 원의 예산을 들여 동양 최대 규모의 부속 병원을 건립 중이었다. 만약 부속 병원이 완공되면 의과대학은 조직과 직원이 2배 이상 증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현재 의과대학 캠퍼스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의과대학과 병원 기구도 확대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의과대학 측은 문리과대학 캠퍼스에 장차 연구실, 강의실, 부속병원, 기숙사 등을 갖춘 '종합의학캠퍼스'를 건설하는 것이 바로 교육 투자이며, 동숭동 캠퍼스를 보존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아파트 건설 계획이 계속 추진되자 아파트 건설에 반대하는 여론은 운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1963년도 문리대 졸업생인 김만옥, 이정자, 이춘재 등을



대표로 한 주부 14명은 9월 18일에 문리과대학 동창회장이자 공화당 소속인 박준규 정책위 의장을 찾아가 정부가 여의도에 세우기로 계획한 국립도서관을 서울대학교 본부 자리로 유치하여 서울대학교 본부와 중앙도서관, 문리과대학 건물이 들어서 있는 6천여 평 캠퍼스를 독서 광장으로 조성하는 데 동창회가 앞장서 줄 것을 호소하였다. 2만 1천여 평의 문리과대학 부지 가운데 운동장을 제외한 캠퍼스 자리는 불과 6천 평인 까닭에 5억 4천만 원이면 충분히 되찾을 수 있으므로, 여의도도서관 건립비인 17억 원으로도 도서관을 옮겨 짓는 것이 가능하다는 생각이었다.

1975년 8월 23일, 김주남 건설부 차관은 문리과대학과 사범대학 부지에 아파트를 건립하는 계획을 전면 취소한다고 발표하였다. 캠퍼스 보존 운동의 직접적인 결과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아파트 건설에 반대하는 강력한 여론이 정부의 태도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음은 분명하였다.

이후 정부는 문리과대학과 사범대학 부지를 일반에 매각하는 방안과 서울시 시유지와 맞바꾸는 방안 등을 검토하였다. 그렇지만 땅값이 엄청나게 비싸고 강북 인구 억제책에 따라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없어 일반 매각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일단 공원 부지로 사용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그러나 또 한 달이 지나자 건설부는 결국 문리과대학과 사범대학 부지를 주택지로 일반에 매각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은 1974년 12월 9일 문리과대학 구내의 대학본부 건물과 주변부지 6백 평을 주택공사에서 1억 2천만 원에 매입, 사무실과 각종 문화 활동 센터로 활용하기로 하였으며, 1978년 5월 17일 기아산업이 구 문리과대학 대지 417평에 약 4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3층의 학산(鶴山)기술도서관을 건립하였다. 그리고 건설부가 일반 매각 결정을 한 지 4년이 지나 동승동 캠퍼스는 이제 '문화의 거리'로 변하였다. 1979년 5월 19일 문리과대학 자리에서 교양 잡지 『샘터』의 신사옥과 화랑이 문

을 열었고, 21일에는 문예진흥원이 신축한 종합문화회관 중 미술회관이 개관하였다. 문예진흥원 뒤쪽으로는 청년작가회관도 들어섰고, 사설 화랑, 전시장, 고급 레스토랑 등이 대학천을 사이에 두고 서너 곳 자리 잡기 시작하였으며, 미술회관 옆으로 공연장도 몇 곳 들어서게 되었다. 문예진흥원은 또한 문리과대학



그림 1-1-50 옛 동승동 캠퍼스의 대학본부 건물. 현재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사용하고 있다.

1,200평 부지에 ‘마로니에조각공원’을 조성하여 1984년 5월 10일 일반에 공개하였다. 이로써 문리과대학 교정의 마로니에는 이제 일반 시민들의 품 속으로 돌아가게 되었으며, 캠퍼스는 시민들의 휴식터이자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를 확고히 하였다.



그림 1-1-51 1984년 5월, 옛 문리과대학 교정에 조성한 마로니에조각공원.

이제는 동숭동캠퍼스의 옛 건물은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으나 그나마 문예회관과 시민의 안식처로서 사색과 추억을 더듬을 수 있는 장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은 과거의 휘황한 지성과 열정의 잔흔(殘魂)이 아직 가시지 않은 탓이었으리라. (『대학신문』 1982년 10월 18일자 「옛 캠퍼스를 찾아서」)

관악 캠퍼스로의 이전과 함께 옛 캠퍼스들은 기억 속 공간에서나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옛 공간에 대한 사람들의 기억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그 부지의 사용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그리고 이러한 기억의 공간을 둘러싼 논쟁은 현재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공과대학이 위치하였던 공릉동 캠퍼스는 현재 서울산업대학교가 자리하였는데, 최근 경성제국대학 시절부터 온존해 온 공릉동 캠퍼스의 이공학부 건물들을 등록 문화재로 지정할지 여부를 두고 대학 측과 문화재청이 대립하였다. 개발과 보존의 논리는 이미 구 캠퍼스 부지 활용 문제를 둘러싸고 확인했던 바이다. 그렇지만 여러 주체들의 다양한 지향이 공간들 위로 교차하는 한, 공간을 둘러싼 논쟁은 언제 어디서든 새로운 형태로 다시금 나타나게 될 것이다.

### 제 3 절 캠퍼스와 환경

#### 1) 종합화 이후의 캠퍼스

서울대학교는 창립 30주년을 앞둔 1975년이 되어서야 관악산을 터전으로 종합화의

꿈을 실현하였다. 이때부터 관악 캠퍼스는 연건 캠퍼스 및 수원 캠퍼스와 더불어 3대 캠퍼스 체제를 이루었다.

여기에서 잠시 새롭게 태어난 관악 캠퍼스를 조망해 보자. 예로부터 ‘경기 금강(京畿金剛)’, ‘소금강(小金剛)’이라 불리던 관악산 북쪽 기슭에 자하동천을 옆에 끼고 위치한 관악 캠퍼스는 관악산 산세를 최대한 살려 조성하였다. 관악산 정상에서 북서로 뻗어 내리는 능선을 중심으로 좌우 계곡에는 수영장과 댐을 건설하였고, 더 내려온 곳에는 천문대와 교수회관을 세웠다. 전망대 역할을 하는 교수회관과 본부 앞 동산을 연결하는 축 위에 중심 건물들을 배치하였는데, 교수회관 아래 중앙 구릉 부분에는 등고선을 따라 건물을 일자로 배치하였고, 그 아래 캠퍼스 중심 부분에 중앙도서관과 본부, 전면 광장을 두었다. 주 능선 좌우에 형성된 계곡에는 교육 시설 4동을 한 쪽이 트인 ‘ㄷ’ 자형으로 배치하였으며, 각 동은 오버브리지로 연결하였다. 관악 캠퍼스는 전체적으로 볼 때 지형의 특성을 살리면서 병렬형(並列型)과 중정형(中庭型)을 혼합 배치한 형상을 보였다.

관악 캠퍼스를 조성할 때 건물의 건설과 함께 건물을 둘러싼 자연 환경, 오픈스페이스, 그리고 각종 옥외 장치물 사이의 관계를 조정하는 캠퍼스 조경 사업도 진행되었다. 캠퍼스 조경 사업은 건물 사이 공간을 쾌적하고 아름답게 하여 대학 인구가 더 나은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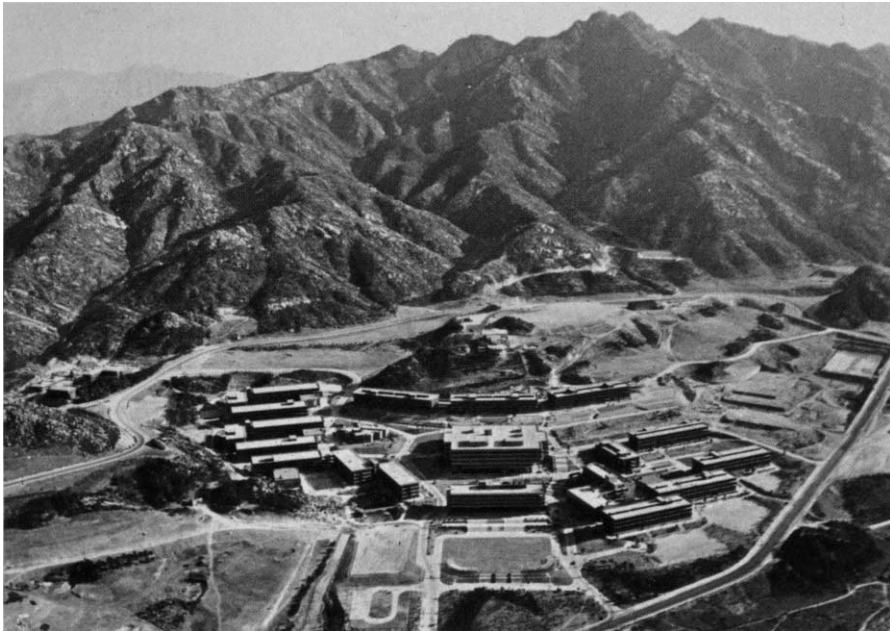


그림 1-1-52 1975년 서울대학교 관악 캠퍼스 전경

힘을 쌓을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 전반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었다. 관악 캠퍼스 조경은 ‘수유인작 완자천개(雖由人作 宛自天開)’, 곧 사람이 만든 것이기는 하나 마치 하늘이 만들어 놓은 것 같이 느껴지도록 하라는 한국적 이념을 기본 개념으로 하였으며, 이 밖에도 한국 전통 양식과 학교 전통 요소를 도입하여 고유미가 넘치는 캠퍼스 환경을 만드는 동시에 전체 환경의 통일성과 다양성을 달성하고자 했다.

다시 관악 캠퍼스로 시선을 돌려 보면 돌출된 처마 지붕과 노출 콘크리트 가구물(架構物), 1층 화강석 외벽 등으로 거의 동일하게 처리한 건물 외관은 캠퍼스에 통일된 느낌을 주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러한 통일성이 너무 과도하여 건물 각각의 고유함이 드러나지 않고 획일적이기까지 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또 자연과 조화롭게 하기 위해 능선을 따라 건물을 배치한다는 의도는 일단 성공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이로 인해 능선 위쪽에 위치한 건물 창으로 캠퍼스를 내려다 볼 경우 슬래브 지붕이 겹겹이 보일 뿐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그렇지만 종합화 이후 30여 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다시 캠퍼스를 조망해 보면 당시 ‘획일적’이라 했던 건물들이 새롭게 건설한 ‘개성적’ 건물들 속에서 그나마 캠퍼스의 통일성을 유지해 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그사이 캠퍼스 공간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말해 준다. 이러한 변화를 단순한 건물 증가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지금부터 종합화 이후 캠퍼스 공간에 불어닥친 새로운 변화 흐름들을 따라가 보자.

『대학신문』 1975년 12월 1일자는 ‘관악 캠퍼스에서의 한 해를 보내고’라는 부제 아래 종합화의 득과 실을 논하는 자리가 마련되어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그 중 관악 제1회 졸업을 앞둔 한 학생은 자신을 서울대학교 발전과 종합화 과정의 희생자라면서 서울대학교가 세계 대학으로서 진정한 종합과 새로운 전통 확립을 위해 나아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하였다. 또 인문대학의 한 교수는 서울대학교만이 갖는 독특한 분위기가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하면서 관악 캠퍼스에 떠도는 시멘트 냄새를 몰아낼 독특하고 훈훈한 기운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관악 캠퍼스라는 새로운 공간을 어떤 성격으로 만들 것인가는 그 공간을 구성하는 여러 주체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어우러지며 오랜 시간을 두고 함께 만들어 갈 문제였다.

이와 같이 공간은 그 구성원들에 의해 형성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관악 캠퍼스의 공간 입지 자체가 구성원들의 장래 활동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앞서 말했듯이 서울대학

교 종합캠퍼스가 관악산 기슭에 자리 잡게 된 이유는 주로 서울 도심과 가깝다는 점과 한강 이남을 개발하려는 정부 방침 등이었다. 그런데 항간에는 정부가 1960, 70년대에 시위를 주도했던 서울대학교의 파급력을 제한하고자 시내 곳곳에 흩어진 캠퍼스들을 관악산 기슭에 몰아넣었다는 말이 떠돌았으며, 이는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채 선배들 입을 통해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다. 그렇지만 관악 캠퍼스로 이전한 초기만 하더라도 서울 불광동에서 관악 캠퍼스를 통학하는 데 왕복 4, 5시간 정도 걸렸다고 하니 당시 학생들이 느꼈을 고립감은 분명 대단했을 것이다. 더군다나 서울대학교 정문 맞은편에 ‘동양에서 크기로 다섯 손가락 안에 든다’는 파출소가 위치하였기 때문에 캠퍼스 건설 당시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학생들은 그 말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종합캠퍼스가 관악산 기슭에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학생들 활동이 주변 지역과 고립되어 캠퍼스 내부에만 갇혀 있던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학생들은 난곡 등지의 철거촌 교육 문제라든가 탁아 문제와 같은 지역 문제에 적극 참여하여 공부방 활동을 펼치기도 하였다.

한편 공간의 변화는 서울대학교 구성원의 생활과 의식에도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였다. 종합화 이전 교수와 학생은 단과대학을 공동체로 하는 가족 분위기 속에서 생활하였다. 교수와 학생은 인간관계를 강의실보다도 연구실 주변에서 비공식적인 접촉을 통하여 맺었다. 하지만 종합화 이후 교수와 학생 관계가 점차 공식화하였고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야 접촉할 수 있었다. 또 대중 교육 기관으로 서울대학교의 위상이 바뀌면서 개인주의가 만연하는 한편 종합화 이전 세대의 낭만성과 귀족적 취향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성향들도 나타났다.

1980년에 공과대학의 관악 캠퍼스 이전이 완료되어 실질적으로 종합화 계획을 완성하였을 때, 관악 캠퍼스는 외적 강제에 의해 또 다시 새로운 변화를 요구받았다. 1979년 ‘10·26 사태’로 학원 자율성을 엄격히 제한하던 유신 체제가 막을 내리자 대학에는 이른바 ‘대학의 봄’이 찾아왔다. 그러나 1980년 ‘5·17 쿠데타’로 신군부가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7월 30일에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가 ‘7·30 교육개혁조치’를 내놓았는데, 이는 앞으로 있을 격변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학부 정원의 대폭 증원을 주요 골자로 하는 7·30 교육개혁조치는 당시 서울대학교가 지향하던 대학원 중심 대학과 상충하는 것이었다. 7·30 교육개혁조치에 따른 졸업 정원제 실시로 학생 수는 급증하였다. 1980년과 1981년 사이에 학부생이 2,000명 증가하고 대학원생이 600명 늘어남에 따라 총 학생 수가 무려 2,600명 증가하였다. 이후

1984년까지 대학원생 증가는 소폭이었지만, 학부생 증가는 계속되어 매해 2,500명씩 증가하였다. 따라서 본래 2만 명을 적정 인원으로 보고 건설한 관악 캠퍼스는 총 3만여 명을 수용하기에 이르렀다.

1980년대 서울대학교는 말 그대로 만원이었다. 일례로 1980년대 초 한 수업의 경우 처음에는 정원이 80명인 강의실을 배정받았지만 수강 학생은 252명이었다. 이에 강의실을 옮겼지만 이마저도 160명 정원이어서 수강 학생 3분의 1 이상은 책상에 앉지도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태에 대해 당시 수업 시간 편성실의 한 관계자는 ‘분반을 하려면 교수가 부족하고 대형 강의실로 바꾸어 주려고 찾아 봐도 다른 과목과 동일시간대여서 미해결 상태’라며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한편 이규호 문교부 장관은 ‘학생들의 수가 갑자기 불어서 여러분이 매우 불편을 느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면서 연차적인 계획에 따라 시설과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도서관 좌석도 극히 부족했으며, 점심시간에 식당은 식권을 사기 위한 줄이 50m 이상 장사진을 이루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시도는 졸업 정원제 실시와 함께 이미 시도되었다. 환경대학원 유병림 교수 등은 캠퍼스 전반에 걸친 시설 확충 문제를 공동 연구하여 그 결과로 『서울대학교 종합캠퍼스 시설장기발전계획』(1980년)을 제출하였다. 이것은 고병익 총장의 지시로 1979년부터 시설 증설 문제를 연구해 오다가 졸업 정원제 실시를 계기로 다시 증원문제에 초점을 맞춰 종합적인 시설 확충안을 내놓은 것이었다. 이 연구는 앞으로 대학 정원이 계속 늘어날 경우 대학 시설도 1985년도에는 2배, 1995년에는 4배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이 경우 현재의 캠퍼스 부지는 상대적으로 협소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새로운 캠퍼스 부지 확보 등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종합계획 수립 문제는



그림 1-1-53 1980년대 초 강의실 풍경. 졸업 정원제의 영향으로 학생 수가 급증하자 강의실에 자리가 없어 서서 수업을 듣는 학생들도 생겨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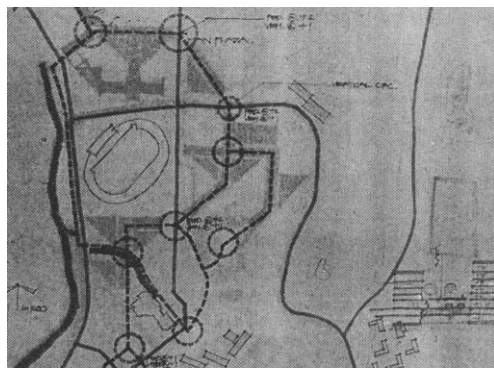


그림 1-1-54 환경대학원 유병림 교수 등이 제안한 『서울대학교 종합캠퍼스 시설장기발전계획』(1980년)

그림 1-1-55 '풀리지 않는 삼각관계(?)'. 새로운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정부, 학교 당국, 학생 3자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을 풍자한 「대학신문」 1983년 6월 6일자 만평.



서울대학교와 정부 사이의 견해차 등으로 제대로 된 실마리를 찾지 못하였다. 실제적인 종합계획으로서 '서울대학교 발전장기계획(1987~2001년)'이 수립된 것은 '종합10개년계획'이 종료된 이후 거의 10년이 지난 후의 일이었다.

발전장기계획은 1985년부터 '대학발전심포지엄'을 통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1986년 2월 24일 문화관 소강당에서 개최된 제3차 심포지엄 주제는 '캠퍼스 및 시설의 합리화 방안'이었다. 발표

를 맡은 환경대학원의 황기원 교수는 서울대학교가 대학원 중심 대학이라는 기본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서울대학교 시설과 캠퍼스 변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현재의 당면 문제들은 1970년대 종합화 작업이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학 인구가 급증하고 교육 수요가 급변하여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진단하였으며, 대학원 중심 대학이 요구하는 시설 수요를 충족시키는 일이 발전장기계획 시설부문에서 해결해야 할 기본 과제라고 지적하였다.

발전장기계획은 1987년 8월 7일에 최종 확정되었다. 발전장기계획의 하위 계획으로 수립한 『서울대학교 발전장기계획 캠퍼스부문계획』(1987년)은 캠퍼스 합리화를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즉 농과대학과 수의과대학을 관악 캠퍼스로 이전 수용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이때 관악 캠퍼스는 명실상부한 종합대학교로서 역할을 강화함과 동시에 교육 연구 시설뿐만 아니라 지원 시설과 학생 문화 시설에서도 상위 중심 시설들을 관악 캠퍼스에 집중시켜 중핵 캠퍼스로서도 역할을 다하도록 하였다. 또 공간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공간 확보를 위해서 교지 확장을 계획하는 한편, 기존 시설 개편도 동시에 진행하여 교육 연구 시설을 체계화하고 생활 교육 시설을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관악 캠퍼스의 경우 순환 도로 내부를 중심으로 개발하고 외부는 보존하려 한 기존 패턴을 유지하여 신규로 조성되는 교육 연구 시설을 순환 도로 내부에 집적토록 하였으며, 기본 시설 철거가 대부분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건물 주변 가용지에 새로운 시설들을 짓되 가급적 고층화하도록 하였다.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과 시설 간 상충도를 고려하여 정문 일대에는 '대학 문화 단지'를 조성하고, 낙성대 일대에는 기숙사, 학생 아

파트, 교수 아파트 등으로 구성되는 ‘대학 생활 단지’를 조성토록 하였다. 또 공간의 ‘획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물 외관, 조경, 표지 체계 등을 개선하여 대학별로 또는 계열별로 개성이 드러나게 하였다.

계획대로 농과대학과 수의과대학이 관악 캠퍼스로 이전할 경우 장차 관악 캠퍼스와 2대 캠퍼스 체제를 이루게 될 연건 캠퍼스는 관악 캠퍼스와 달리 도시 지역 내에 있다는 점에서 계획상 또 다른 접근이 필요하였다. 뿐만 아니라 연건 캠퍼스는 캠퍼스 중앙에 대학 병원이 자리 잡고 있어 유동 인구가 많은 도심형 교육 연구 환경이라는 특징이 있었다. 시설 배치는 처음부터 장기 계획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라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건물 상호 간 연계가 부족하고 체육 공간이나 휴식 공간 등 옥외 공간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다. 따라서 대규모 재개발을 통해 건물을 재배치하지 않고서는 필요한 외곽 시설 확충과 도로 및 옥외 공간 확보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캠퍼스에 연접한 교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였다. 연건 캠퍼스는 관악 캠퍼스와 달리 의학계 특화 캠퍼스로서 역할을 더 뚜렷하게 수행해야만 했고, 관악 캠퍼스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원 시설과 생활 교육 시설 등을 자체로 해결할 수 있는 자족적 도심형 캠퍼스로서 역할을 해야만 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1970년대 ‘민족의 대학’에서 2000년대 ‘세계의 대학’으로 재도약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다시 한 번 마련하였다. 그러나 종합10개년계획이 그랬던 것처럼 발전장기계획 또한 예기된, 혹은 예기치 못한 문제들에 직면하였고, 해결을 위한 노력들 또한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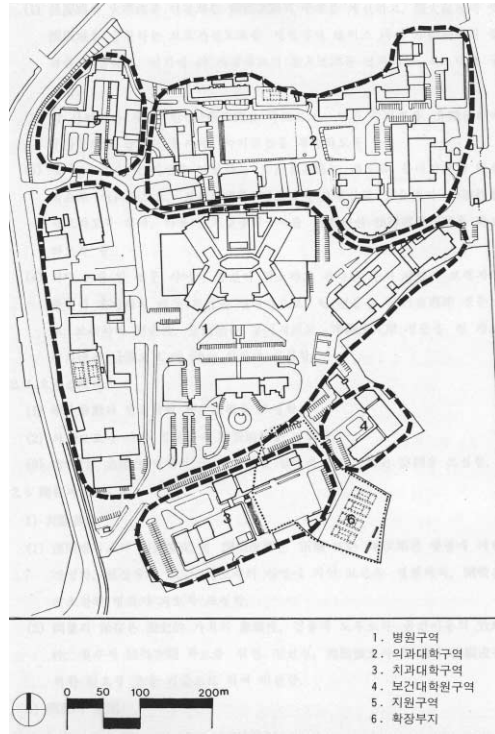


그림 1-1-56 『서울대학교 발전장기계획 캠퍼스부문계획』(1987년)에 따른 연건 캠퍼스 계획도



## 2) 캠퍼스의 확충

과밀화로 인한 캠퍼스 확충 요구는 이후 <표 1-1-3>에서 볼 수 있듯이 각종 시설에 대한 투자로 이어졌다. 관악 캠퍼스의 경우 1987년 현재 연면적 29,698m<sup>2</sup>에 지나지 않았던 강의실 면적이 1990년에는 40,091.2m<sup>2</sup>로 약 1.3배 이상 증가하였고, 1995년에는 48,619m<sup>2</sup>로 1987년에 비해 약 1.6배 증가하였다. 강의실 수 역시 증가하여 1987년 249개였던 강의실 수는 1993년 253개, 1995년에는 346개로 늘어났으며, 교수 연구실은 1995년에 1987년보다 약 1.7배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기초적인 교육 연구 시설이 증가한 것은 각 단과대학별로 건물을 신축하였기 때문이었다. 선경그룹 기부로 건립하게 된 선경경영관(현 SK경영관)은 대운동장 위 보조 운동장 자리에 총 면적 10,608m<sup>2</sup> 총 사업비 약 40억 원 규모로 1989년 7월에 착공하여 1990년 10월 15일에 완공하였다. 내부에는 경영대학 관련 시설과 함께 현대식 국제 회의실도 갖추었다. 1993년에 기공하여 1994년 말에 완공한 사회과학대학 건물은 총 면적 18,493m<sup>2</sup> 규모이며 국고로 지었다.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로 내부에는 강의실, 교수 연구실, 연구소 시설을 갖추었으며, 중앙도서관의 사회과학대학 분관도 개설하였다. 공과대학은 1996년에 제1공학관을 건설하였는데, 이것은 '제2 캠퍼스'라는 개념을 필요로 할 정도로 학내 다른 시설과 규모나 내용에서 비교할 수 없게 방대했다.

제2 캠퍼스와 관련한 논의는 이미 1989년부터 제기되었다. 1991년 들어 고급 산업

<표 1-1-3> 건물 신축 사업 현황(1986~1996년)

(단위: m<sup>2</sup>, 년, 백만 원)

시설명	총면적	사업 기간	총사업비	출연자
전자계산소	6,753	1984~1986	1,802	국고
농대대형강의동	1,309	1985~1986	305	국고
규장각	3,715	1985~1989	1,348	국고
반도체공동연구소	4,298	1985~1988	2,916	국고
의대교육연구동	14,015	1986~1988	5,237	국고
기초과학관	5,000	1986~1988	1,732	국고
사대부속학교	5,314	1986~1987	1,093	국고
공대실험동	1,497	1987~1988	319	국고
보건대학원 시범사업소	1,329	1987~1989	317	국고
농대실험동	2,998	1987~1990	1,260	국고
유전공학연구소	3,569	1987~1990	3,100	국고

〈표 1-1-3〉 계속

시설명	총면적	사업 기간	총사업비	출연자
기숙사	8,000	1987~1989	1,607	국고
농대목장실험축사(1)	800	1991~1992	280	국고
기초과학연구동	4,975	1988~1991	1,500	국고
호암생활관	8,878	1989~1990	40,000	삼성그룹
약학연구관	3,475	1989~1991	1,500	국고
법학연구동	4,000	1989~1990	1,600	국고
선경경영관	10,577	1989~1990	59,000	선경그룹 기부채납
신소재공동연구소	4,800	1989~1990	24,000	(주)일진
농대 목장종합실험축사(2)	10,577	1991~1992	630	국고
컴퓨터신기술연구소	4,800	1991~1992	3,500	삼성복지재단
기초과학 전국공동기기센터	3,306	1990~1992	2,000	국고
지역연구센터연구동	2,200	1991~1992	860	국고
사대부중 보통교실 및 관리실	4,179	1990~1992	1,800	국고
어학실습 및 강의실	3,780	1990~1992	2,100	국고
정밀기계설계공동연구소	3,750	1990~1992	2,280	대우증권
박물관	6,165	1984~1992	3,100	국고
온실	126	1991~1992	1,100	국고
온실관리동	89.6	1991~1992		
제1공학관	41,595	1992~1995	43,763	일부 기업체지원
간이체육관	1,142	1992~1994	480	럭키금성
의대도서관 증축	1,393	1992~1993	810	서울대학교병원
지진관측연구소	351	1992~1993	390	일반회계
정보통신행정연구소	4,723	1993~1994	3,630	한국통신
에너지자원신기술연구소	3,300	1993~1994	2,220	동력자원부
사회과학관	18,493	1993~1995	8,555	국고
선형수조시험동	3,134.5	1993~1994	1,000	대우조선공업
자연과학관	6,800.5	1993~1995	4,750	일부 기업체지원
보조체육관	1,142.4	1992~1993	500	럭키금성
수의대부속동물병원	2,084.9	1994~1996	2,700	국고
근대법학교육100주년기념관	2,218.2	1994~1996	2,950	법대 동창회
컨벤션센터	2,448.4	1995~1996	4,600	삼성그룹
게스트하우스	1,214.5	1995~1996	1,800	(주)유공
수리과학연구동	3,602.9	1994~1996	2,900	홍성대기증
약학관 3	1,070.9	1994~1996	1,174	국고

출전: 『서울대학교 50년사』 714~715쪽.



그림 1-1-57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시설확충종합계획』(1992년)의 공학관 구상도

기술 인력의 양성을 골자로 정부와 서울대학교는 공과대학 정원 증원 논의를 활발하게 벌였고, 이에 연계하여 제2 캠퍼스 문제를 새롭게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92년도부터 공과대학 정원을 증원키로 확정함에 따라 대학본부는 제2 캠퍼스를 시급히 조성해야 한다고 보고 김상주 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캠퍼스

스기획위원회를 열었다. 그리고 경기도 안양시 비산동에 있는 농과대학 수목원 부지에 제2 캠퍼스를 조성하는 문제를 검토하였으나, 결국 관악산 자운암 아래 터, 즉 공과대학 남단에 새 건물을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그 내용은 1992년 10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시설확충종합계획』이라는 보고서로 공식 발표하였다.

공과대학 시설확충종합계획은 절대 부족한 교육 연구 시설의 충족, 주변 환경과의 조화, 성장과 발전의 대비를 목적으로 수립하였는데, 확충 시설은 크게 교육 연구 시설, 연구 지원 시설, 후생 복지 시설의 3가지로 나눌 수 있었다. 시설 확충 계획의 핵심을 이루는 교육 연구 시설은 전문 연구 분야에 따라 전기 계열, 화공 계열, 기계 계열을 각기 수용하는 세 공학관으로 다시 구분하였다. 제1공학관은 전기 계열이 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자운암 아래 중심 시설 지역 북쪽에 배치하였다. 이 시설은 세 공학관 중 가장 규모가 컸다. 또 화공 계열이 사용하는 제2공학관은 중심 시설 지역 남쪽에 선형으로 배치하여 제1공학관과 연계하도록 구성하였으며, 기계 계열이 사용하는 제3공학관은 기존 정밀기계설계연구소 남측에 인접 배치토록 하였다.

한편 ‘서울대학교 발전장기계획(1987~2001년)’은 대학원 중심 대학을 실현하기 위한 산학연(産學研) 협동 연구 단지 조성을 제안한 바 있었다. 이후 1991년부터 연구 공원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하여, 1992년 12월에 연구 공원 조성을 위한 연구에 착수하였고, 이듬해 7월 연구 공원 설립 계획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완성하였다. 1994년 3월 ‘서울대학교 연구공원조성추진기획단’을 구성하고, 이어 5월에 캠퍼스계획위원회와 학장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안을 확정, 교육부에 보고하였다. 이때 입주 분야, 운영 방법, 규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대학교 연구공원조성추진위원회’를 구성한 후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동년 6월 1일에는 학내 의견 수렴을 위한 방도로 ‘서울대학교 연구 공원 조성을 위한 토론회’를 박물관 강당에서 개

최하였다.

그런데 총학생회와 대학원자치협의회는 위의 토론회에 앞서 ‘교육연구여건개혁과 낙성대산학연구단지 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결성하여 연구 공원 조성과 관련한 문제점을 본격적으로 제기했다. 이들은 토론회에서 기업들 대부분이 본래 연구 공원 조성 취지와 달리 연수원 설립을 계획하고 있고, 낙성대 입지 조건이 향후 발전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부담 증가로 인해 대학원생들은 더욱 열악한 연구 환경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몇몇 교수들도 연구 공원 조성에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는데, 대체로 학문 연구의 자율성을 침해당할 수 있다는 점과 연구 공원에 우수 재벌들이 들어설 경우 재벌이 공과대학이나 경영대학의 연구 방향을 좌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또한 산학 협동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한다면 학교는 결국 기업을 상대로 ‘땅 장사’만 한 결과를 낳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반면 사회과학대학 박삼옥 교수는 연구 공원 설립을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으며, 문제는 어떻게 바람직한 연구 공원을 설립하느냐라고 주장하였다. 대학원생의 프로젝트 부담과 관련해서도 김동건, 안경환 기획실장은 캠퍼스 내 공간 이용이 기업들의 주목적이기 때문에 학생들 우려와 같이 프로젝트 부담이 가중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하였으며, 또 교수가 연구주제와 무관한 프로젝트를 맡지 않고, 대학원생들 또한 프로젝트를 강제로 맡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바 없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논의를 거쳐 결국 1994년 9월 『서울대학교 연구공원종합계획』이라는 보고서를 완성하였다. 국제 수준의 연구 단지 조성을 목표로 한 이 계획안은 연구 공원 시설들을 크게 산업체 입주 연구동과 인큐베이터 및 공동 지원 시설, 유엔국제백신연구소로 구분하였다. 시설 규모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업체 입주 연구동은 대기업 연구 개발팀의 입주 시설로서 서울대학교 부속 연구소들과 공동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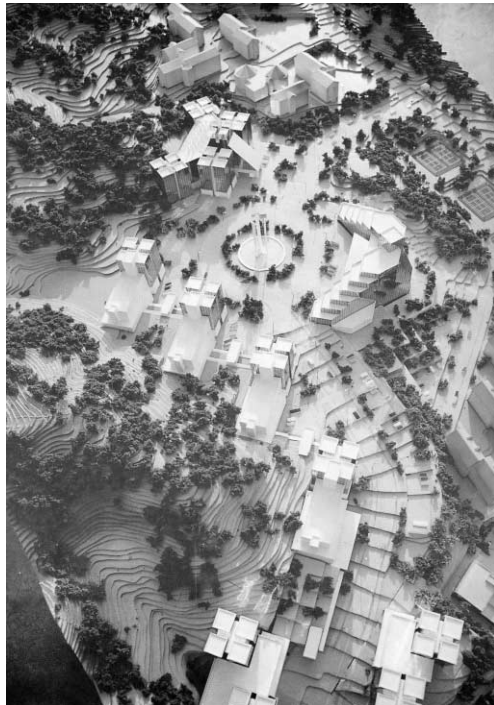


그림 1-1-58 『서울대학교 연구공원종합계획』 (1994년)의 서울대학교 연구공원 조감도

확하였다. 인큐베이터는 중소기업 창업 보육 시설로서 하이테크와 관련한 새로운 사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공동 지원 시설은 연구 공원 내 각 연구소 및 인큐베이터의 연구 활동을 지원토록 하였다. 또 유엔국제백신연구소는 백신 연구 개발을 위한 국제 공동 연구소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현재 연구 공원에는 유엔국제백신연구소가 2004년 10월 28일에 정부에게서 건물을 제공받아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산업체 입주 연구동에는 SK텔레콤, LG전자 등이 입주해 있다.

서울대학교는 또한 1999년 이후 두뇌한국21 사업의 일환으로 캠퍼스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설 확충 계획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대학원기숙사 및 주거 시설, 대학원교육연구동, 정보화 사업, 학·산 공동 연구 시설, 멀티미디어 강의동 등이 3단계에 걸쳐 캠퍼스 곳곳에서 사업 추진 중에 있다. 2005년까지 대학원기숙사(I, II) 및 외국인·연구원 숙소, 멀티미디어 강의동(I, II), 대학원교육연구동(I) 신축을 완료했으며, 2006년 현재 대학원교육연구동(II, III)을 건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캠퍼스 지도는 또 다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서울대학교 종합화라는 시각에서 가장 의미가 큰 것은 역시 농업생

〈표 1-1-4〉 두뇌한국21 대학원전용시설 구축 사업 계획

(단위: m<sup>2</sup>)

사업명		연면적	위치 확정
1단계 (1999~2000년)	대학원기숙사(I) 및 외국인·연구원 숙소	36,047	2000년 4월
	대학원기숙사(II)	6,823	2000년 4월
	정보화 사업	1식	2000년 4월
	멀티미디어 강의동(I, II)	10,590	2000년 4월
	대학원교육연구동(I)	26,430	2000년 4월
2단계 (2001~2003년)	대학원기숙사(III)	43,630	2001년 12월
	대학원교육연구동(II)	52,890	2001년 12월
	박사후과정 및 대학원 가족생활동(I)	13,220	2001년 12월
	정보화 사업	1식	2001년 8월
3단계 (2004~2005년)	멀티미디어 강의동(III)	6,610	2003년 9월
	대학원교육연구동(III)	26,440	2003년 9월
	정보화 사업	1식	2003년 9월
	박사후과정 및 대학원 가족생활동(II)	6,610	2003년 9월
	학·산 공동 연구 시설	19,830	2003년 9월
	학·산 연구 단지 중심 지원	13,220	2003년 9월
계		262,340	

명과학대학과 수의과대학의 관악 캠퍼스 이전 사업이다. ‘서울대학교 종합10개년계획(1968~1977년)’에 따라 곳곳에 분산되어 있던 단과대학들이 1975년부터 관악 캠퍼스로 이전하였으나, 연건 캠퍼스와 수원 캠퍼스는 각각의 학문적 특수성으로 인해 이 계획에 포함되지 못하였다.

1980년에 종합화가 일단락된 후 이전하지 않은 캠퍼스의 여러 문제점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지적되었다. 연건 캠퍼스는 수원 캠퍼스와 마찬가지로 행정 처리와 후생 복지 면에서 많은 불편이 있었고, 예과와 본과의 연계가 부족하여 신입생들이 많은 혼란을 겪는 등 여러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병원과 유기적 연관을 갖는 학문적 특수성 때문에 캠퍼스 이전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지는 않았다.

반면 수원 캠퍼스는 교수들과 학생들이 줄곧 캠퍼스 이전 문제를 거론하였다. 수원 캠퍼스는 관악 캠퍼스와 멀리 떨어져 기본적으로 교육 연구 활동에 제약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교육 시설 노후, 비행 소음으로 인한 교육 환경 저해, 부속 현장 시설의 낙후 및 추가 개선 한계, 복지 시설 부족, 행정 및 재정 낭비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었다. 한편 농학의 연구 추세가 생산 위주 농업에서 첨단 과학 기술을 이용한 가공, 유통, 저장, 기계화 및 자동화 농업과학으로 전환되어 감에 따라 농과대학 이전을 가로막았던 학문적 특수성도 그 의미가 줄어들었다. 특히 농업 과학은 생명 과학을 중심으로 생물 공학의 핵심 분야로 간주되면서 인접 학문과의 공동 연구 또한 절실하게 요청되었다.

‘서울대학교 발전장기계획(1987~2001년)’이 농과대학과 수의과대학 이전 계획을 제시한 이후, 농과대학계획위원회는 1년 간의 연구 끝에 공과대학 및 자연과학대학과 연계를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이전 후보지로 공과대학 서쪽 도림천 건너편(칠성계곡) 일대를 물색하였고, 대학본부는 1989년 12월 28일에 칠성계곡을 대상으로 한 캠퍼스 확충 계획에 대해 교육부 승인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교육부는 관계 부처 간 견해차로 추진이 어렵다는 회신을 보내 왔다. 대학본부는 이듬해 4월 공과대학 남측 4·19탑 뒤를 대상으로 계획안을 수정하여 제출하였고, 11월에는 안양수목원을 대상으로 하여 재차 교육부 승인을 요청하였다. 이후에도 앞서 제출한 계획안들의 재승인 요청을 반복하였으나, 교육부는 부정적인 회신뿐이었다.



그림 1-1-59 1992년 9월 농과대학 이전을 요구하는 수원 캠퍼스 농과대학 학생들

교육부가 승인을 거부한 주된 이유는 서울시와 건설부 등에서 계획안이 수도권 정비 계획안과 저촉될 뿐만 아니라 예산 편성상 문제가 있다며 농과대학 이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학내에선 농과대학 이전은 이미 1971년에 정부가 예산안을 승인한 사항이고 농학관 설립은 경영관이나 사회과학관을 증축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며, 도시 인구 유입과 관련해서도 서울대학교 정원 책정 시 이미 농과대학 학생 수를 포함하므로 수도권 유입이라 보기 어렵다는 반론을 제기하였다.

1993년 12월에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재원 마련을 위해 교지를 매각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정부 예산을 먼저 끌어 쓰고 나중에 상환할 수 있게 되었고, 1994년 4월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과밀 억제 권역이라 하더라도 교육 정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농업생명과학대학 이전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이러한 제반 상황 변화와 함께 1994년 9월 30일 서울대학교는 정부 측 심의를 받기 위해 ‘농업생명과학대학·수의과대학 캠퍼스종합화기본계획’을 마련하여 교육부에 제출하였다. 이 계획안은 목장 등 실험 실습 시설을 제외한 교육 연구 시설의 관악 캠퍼스 이전과 이전 시 위상 재고를 위한 학제 개편안이 주요 골자를 이루었다. 1996년 초 공과대학 제2공학관 옆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1998년에 관악 캠퍼스로 이전하고 1999년에 수원 부지를 매각하여 소요 예산을 상환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런데 이 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관악구청과 서울특별시청, 건설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건물 신축으로 인한 자연 파괴 문제를 제기하였고, 언론도 서울대학교를 관악산 파괴 주범으로 지목함에 따라 여론도 점차 악화되었다. 계획안 수정은 불가피했으며, 따라서 차량계 일대(자연과학대학 운동장 옆 셔틀버스 주차장)로 부지를 변경하였다. 차량계 부지는 1996년 1월에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으나, 이후 부지가 협소하고 기존 건물(차량 정비고, 차량계 사무실, 영선 공장, 토목 인부 사무실, 출판부, 격납고, 기상관측소, 관측장)을 이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순환 도로에 인접하여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부지 변경을 재차 요청하였다.

1996년 12월 2일에 개최된 캠퍼스계획위원회는 녹지 훼손을 최소화하는 조건으로 농업생명과학대학 이전 부지를 파워플랜트와 국수봉 사이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 결정 이후 학내에 반대 여론이 일어서 반대 서명 운동으로까지 이어졌다. 인문·사회계를 중심으로 국수봉 부지와 인접한 단과대학 교수들은 농업생명과학대학 국수봉 부지 이전안을 철회하고 논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서명 작업을 벌였다. 농업생

명과학대학이 관악 캠퍼스로 이전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국수봉 부지로 이전할 경우 환경 파괴가 불가피하고, 연구 공원과 함께 순환 도로에 교통 체증을 유발할 것이며, 이과 계열 대학과도 긴밀한 연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 반대 이유였다. 또 부지 변경 과정에서 대학 구성원의 의사 수렴 없이 캠퍼스계획위원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였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처럼 학내에서 찬성과 반대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캠퍼스계획위원회는 11월 4일 19명 위원들을 대상으로 국수봉 부지와 차량계 부지를 두고 서면 투표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농업생명과학대학 이전 부지로 국수봉 부지를 최종 결정하였다. 이 결정에는 학문적 연계성 측면에서 농업생명과학대학이 공과대학보다 약학대학이나 환경대학원 쪽에 더 가깝다는 점, 차량계 부지는 정문과 본부 앞의 교통 혼잡을 야기하고 등산로와 가까워 교육 환경에 문제가 있다는 점, 그리고 설계 예산 23억 원을 국고에 반납할 경우 농업생명과학대학 이전 문제 자체가 몇 년 간 보류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그러나 농업생명과학대학 이전을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종결되지 않았다. 관악구청은 농업생명과학대학과 수의과대학 이전은 산림 훼손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공청회를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1999년 4월 7일 관악구민회관에서 ‘도시 계획 사업 실시 계획, 변경에 따른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서울대학교는 농업생명과학대학과 수의과대학의 전문 인력을 활용해 관악산 생태계 보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으나, 의견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난항에 난항을 거듭하여 1999년 10월 19일에 열린 기획위원회 회의에서 국수봉 부지를 대신하여 차량계 부지, 테니스장 부지, 자연과학대학 운동장 부지를 놓고 논의하였다. 그 결과 건물을 짓고도 일부를 운동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연과학대학 운동장 부지가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부 검토에 들어갔으며, 11월 11일에 열린 학장회에서 결국 농업생명과학대학을 자연과학대학 운동장 부지로 이전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한편 수의과대학은 옮기기로 했던 동물병원 근처 부지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해서 결정하였다. 수의과대학은 2002년에 지상 10층 건물로, 농업생명과학대학은 2003년에 지하 2층 지상 9층 건물로 준공되었다. 이와 같이 수의과대학과 농업생명과학대학 이전을 마무리하면서 서울대학교가 추진한 종합화 계획은 완결을 보게 되었고, 국내 최대 종합대학교로서 그 규모를 자랑하게 되었다.



1.1.2 제1부 공간

〈표 1-1-5〉 신축 건물 현황(1996~2005년)

(단위: m<sup>2</sup>)

준공 연도	동수 및 도입 건물(시설)명	연면적(m <sup>2</sup> )	건축 면적(m <sup>2</sup> )
1996	84 근대법학교육100주년기념관	2,218	1,011
	125 컨벤션센터	2,492	1,342
	125 게스트하우스	1,471	627
	141 약학관3	1,071	424
	301 제1공학관	41,623	5,815
	330 제2파워플랜트	2,940	1,807
	931 대학원기숙사	2,021	510
	932 대학원기숙사	2,062	510
	933 대학원기숙사	2,186	479
	934 대학원기숙사	1,884	479
1997	80 수의대부속동물병원	2,085	839
	113 생활관	2,466	878
1998	59 경영연구관 및 산학협동관	9,991	2,456
	129 수리과학연구동	3,216	899
	139-1 정전기속기동	1,529	864
	201 농업생명과학대학환경관	4,114	1,633
	941 관악사복지관	2,697	1,116
1999	49 예술관 연구동	5,158	2,931
	67 학생문예관	4,493	1,326
	82 환경대학원	5,586	1,752
	140-1 국제대학원2	3,921	713
	918 대학원기숙사	5,479	1,044
	936 교직원아파트	4,281	691
2000	30-1 위험물옥내저장소	86	86
	52-1 미대교양실습동	710	423
	311 화학공정신기술연구소	3,971	1,347
	312 정밀기계연구소실험연구동	2,701	791
	150 교수종합연구동	4,733	865
	80 생물공학연구소	206	206
	97 환경안전원1	1,702	630
	98 폐기물보관창고	211	211
	142 제약실습동	3,620	789
	940 연구공원지원시설	18,937	3,436

〈표 1-1-5〉 계속

준공 연도	동수 및 도입 건물(시설명)	연면적(m <sup>2</sup> )	건축 면적(m <sup>2</sup> )
	310 엔지니어 하우스	2,969	1,706
	71-2 포스코생활체육관	6,071	2,484
2001	48-1 전파천문대	412	412
	68-1 신림변전소	3,236	1,089
	104-1 반도체교육관	5,404	1,613
	105 창업보육센터 및 유전공학연구소	2,876	769
	302 제2공학관	26,488	4,012
2002	25 자연대강의 및 실험연구동	8,407	1,459
	85 수의과대학	16,568	3,399
	137 CJ어학관	2,687	656
	942 LG연구동	8,457	1,621
	943 SK텔레콤	10,074	1,791
2003	30-2 공대간이식당	259	259
	43 이공계멀티미디어강의동	4,136	1,186
	83 인문사회계멀티미디어강의동	6,454	1,724
	200 농업생명과학대학	47,256	5,674
2004	44-1 신앙학술정보관	2,692	754
	47 기상관측소	780	284
	68-2 영선공장	546	404
	302-1 공대위험물저장창고	43	43
	314 차세대자동차연구센터	7,343	1,490
	331 차량정비고	295	218
	919 대학원기숙사	18,542	4,021
	946 외국인연구원숙소	17,509	2,079
	950 유엔국제백신연구소	16,982	3,848
2005	10-1 사범대교육정보관	8,175	1,611
	21-1 약대시약창고	64	64
	39 대학원연구동(Ⅰ)	26,440	1,939
	75 제3식당	10,179	1,728
	99-1 정구장관리실	58	58
	121 공관	917	543
	122-1 교수아파트1	2,793	630
	122-2 교수아파트2	781	188
	122-3 교수아파트3	12,910	1,527
	151 미술관	4,486	1,364

지금까지 서술한 주요한 사례들 외에도 캠퍼스 확충은 여러 부문에서 계속되었다. 지난 10년 동안 신축한 건물 현황을 종합해 보면 <표 1-1-5>와 같다. 초창기 관악 캠퍼스에는 40여 동의 건물밖에 없었지만 2005년 3월 현재 198동에 이르게 되었다.

### 3) 미래의 대학, Eco-campus!

오랜 기간에 걸친 캠퍼스 확충으로 시설물의 수요는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었다. 그런데 지속적인 시설물 확충은 있었지만 확충한 시설물을 조절할 수 있는 종합계획은 존재하지 않았다. 물론 종합계획 자체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앞서 서술하였듯이 ‘서울대학교 종합10개년계획(1968~1977년)’에 이어 ‘서울대학교 발전장기계획(1987~2001년)’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1989년 이후 착수한 건설 사업 가운데 발전장기계획과 일치하는 사업은 하나뿐이었다. 부분적으로 연결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네 개에 불과하였다. 사업들 대부분은 발전장기계획에서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이로 미루어 볼 때 그동안 발전장기계획과 무관한 사업이 상당히 많았음을 알 수 있다. 그중에는 기증 건물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그동안 사업 진행 방식이 일단 돈이 생기면 짓고 보자는 식이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웠다. 뿐만 아니라 발전장기계획 자체가 시설의 양적 확장을 위주로 하였기 때문에 기존 시설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고, 장기 발전 방향 없이 돌발적인 개발을 계속한 탓에 캠퍼스 전체의 통일성마저 흐려졌다. 이는 캠퍼스계획을 전문적으로 추진할 실무 기구가 존재하지 않고 담당 주체 또한 명확하지 못한 점에서 기인하는 문제였다. 그리고 정부가 발전장기계획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거나 포괄적으로 승인하지 않아 개별사업마다 교육부 승인과 허가를 받아야 했던 점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이처럼 서울대학교 발전장기계획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건물을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무분별하게 세운 결과 인구 과밀이 아니라 건물 과밀을 고민하기에 이르렀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은 실효성과 장기적 안목을 동시에 지닌 새로운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었다.

캠퍼스계획위원회는 관악 캠퍼스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대학원 환경계획연구소에 연구를 의뢰하였다. 환경계획연구소 황기원 교수 등은 1994년 7월에 최종 보고서인 『관악 캠퍼스 발전관리기본계획』을 제출하였고, 동년 11월 24일에는 이에 대한 공청회



그림 1-1-60 「관악캠퍼스 발전관리기본계획」(1994년)의 지구 상세 계획에 따른 캠퍼스 지역 구분

를 거쳐 계획안을 공식화하였다.

장래에 농업생명과학대학과 수의과대학을 관악 캠퍼스로 이전할 것임을 전제로 한 이 계획안은 1995년부터 2001년까지 7개년 장기 계획으로 크게 물적 계획과 제도 계획으로 구성하였다. 물적 계획은 지구 상세 계획을 포함하는데, 이는 해당 구역에 대한 기속력(羈束力) 있는 건설 관리 계획으로 개별 사업을 가시화할 때마다 그 내용을 조정하는 기준으로 삼도록 하였다. 즉 캠퍼스를 ① 교육 연구 시설지역 I (캠퍼스 순환 도로 안에 조성돼 있는 기존의 교육 연구 시설 지역) ② 외부 교호 지역(대학 부속 시설 지역으로 캠퍼스 순환 도로 외부 지역에서 교문 및 후문에 인접한 지역) ③ 교육 연구 시설 지역 II (공과대학 남쪽 순환 도로 내의 공과대학 확충 지역이자 농업생명과학대학과 수의과대학의 이전 대상 지역)로 구분하고 이들을 다시 세분하여 각 구역마다 성격을 규정한 것이다. 황기원 교수는 이에 대해 '서울대는 캠퍼스이긴 하지만 그 규모 면에서 마치 하나의 도시와 같아 토지를 구획하고 각 구역마다 성격을 명확히 부여해야 했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제도 계획은 관악 캠퍼스 발전관리기본계획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담당 주체를 상설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였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이 계획은 캠퍼스 내에 산재한 미개발지의 성격과 개발 방식을 명시하고 캠퍼스 계획 및 운영 체제를 합리화하는 데 역점을 둔 것이었다. 그리고 무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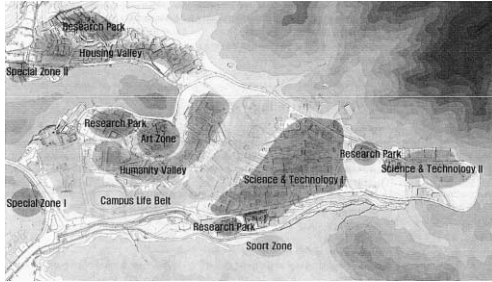


그림 1-1-61 『서울대학교 캠퍼스부문장기계획』(2001년)의 관악 캠퍼스 권역 설계도

보다도 ‘환경적으로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개념을 관악 캠퍼스에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공간 부족 문제를 공간의 효과적 활용과 운영 합리화를 통해 극복하고자 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 계획은 캠퍼스를 전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재개발한

다든지, 제2 캠퍼스나 분교를 조성하는 등 캠퍼스 전체의 구조 개편을 요구하는 수준은 아니었다.

이후 2001년에 ‘서울대학교 발전장기계획(1987~2001)’이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캠퍼스 계획이 요청되어 ‘서울대학교 캠퍼스부문장기계획(2002~2006년)’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기존의 캠퍼스 종합계획들이 실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재정 확보에 대한 구체적 언급도 없이 단순히 계획들만 나열해 두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이 계획의 특징은 ① 계획적 개발 유도 ② 시설의 고급화 ③ 필요에 따른 시설 배정을 원칙으로 한 이른바 ‘실행 계획’을 별도로 마련하였다는 데 있었으며, 특히 ‘캠퍼스시설기획본부’라는 상설 기구 신설과 ‘시설관리정보전산시스템’ 개발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 또한 기본적으로 외부 공간 녹지나 건물 사이 빈 터에 신규건축물을 끼워 넣는 방식을 취한다는 점에서 기존 계획들과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개발 방식이 누적되면 될수록 캠퍼스 공간 구조는 난개발 양상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상황과 맞물려 다른 한편에서는 캠퍼스 난개발에 대한 비판 또한 꾸준히 이어졌다. 『대학신문』 1995년 11월 6일자는 학교 용지가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는데도 새 건물을 짓기 위한 공사를 여러 곳에서 진행하거나 건물을 설계하고 있어 관악 캠퍼스의 ‘숨통’은 트일 날이 없다고 비판하였다. 이후에도 『대학신문』은 ‘건물 신축 많아 과밀화 심각’이라든가 ‘수용 인원 2배를 넘긴 포화 상태의 캠퍼스’, ‘방학은 마무리, 공사는 여전히’, ‘학교는 공사중?!’ 등과 같은 제목으로 기사를 실었다.

또한 공간이 새롭게 만들어지면 공간을 사용하는 주체들 간에 적절한 배분과 배치도 뒤따라야 했으나, 신축 건물 완공에 따라 기존 시설을 재배치하지 않아 단과대학이 분산되고, 한 학부가 여러 건물을 사용하여 학문적 교류가 약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 건물을 신축할 때마다 자치 공간 부족으로 학생들 반발은 늘상 반복되었다. 이 문제는 대학설치기준령에서 ‘대학의 교사는 교육기본시설·지원시설 및 연구시설로 구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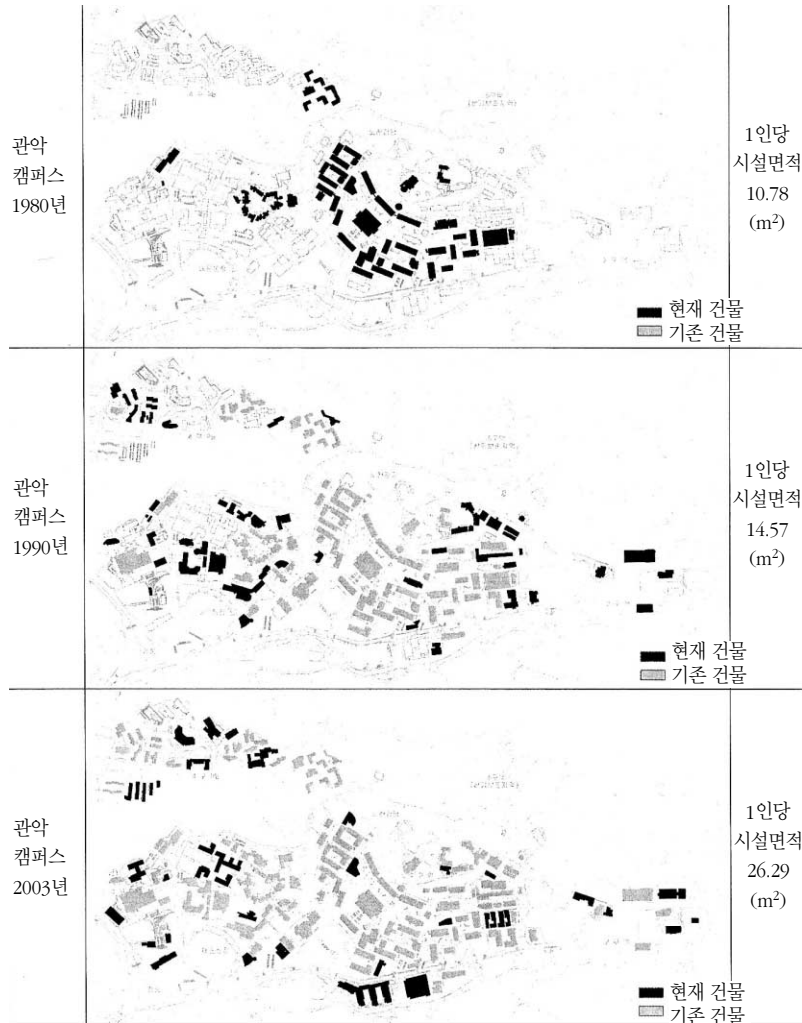


그림 1-1-62 늘어나는 건물, 줄어드는 녹지 공간

다'고 규정하였을 뿐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학생용 자치 공간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다는 데서 비롯하였다. 따라서 학생들은 과방, 동아리방 등을 편법으로 마련해야만 했고, 그 외중에 법에 명시되지 않은 공간을 줄 수 없다는 학교 측과 마찰을 피할 수 없었다. 더구나 사회과학동을 신축하였을 때는 「사회과학동 공간 배정에 관한 조건」이라는 본부 문서에서 학생용 공간은 두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어 더욱 논란이 되었다.

이와 같이 건물 신축을 통한 캠퍼스 확충은 분명 새로운 공간 확보를 위한 노력이었으나, 그 결과는 역설적이게도 오픈스페이스를 잠식함으로써 '포화'라는 공간 부재를 초래하였으며, 때로는 공간 재배치를 둘러싼 갈등을 야기하였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은

주변 자연환경 침해는 학내 비판뿐만 아니라 언론, 지방 자치 단체, 시민 단체 등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환경 문제를 둘러싸고 지방 자치 단체나 시민 단체들과 마찰을 본격화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시설 확충에서 일획을 그었던 1996년 제1공학관 준공 때부터였다. 이를 계기로 1995년에 연구 공원을 건설하면서 매웠던 천지약수터계곡에 대한 불만도 함께 불거져 나왔다. 농업생명과학대학의 이전 부지를 국수봉으로 결정하였을 때 ‘관악산을 지키는 시민모임’과 ‘환경운동연합’ 등이 연대해 서울대학교 난개발을 반대하며 공청회와 주민 총 쫓기 대회, 서명운동 등을 벌였고, 2000년에는 헌법 소원까지 제기하였다. 또 서울시의회는 서울대학교 미개발지구 땅 60만여 평을 서울시로 환수하는 안을 통과시키기도 하였는데, 이에 서울대학교는 순환 도로 밖 녹지는 개발하지 않는다고 발표하였고, 서울시는 문제 지역에 대한 서울대학교 소유권은 인정하지만 개발은 전면 금지하는 방향으로 일을 마무리 지었다. 한편 미술관 건립과 관련하여 서울대학교는 1997년 관악구청에 건축 협의를 신청하였으나 1998년 외환 위기와 녹지 훼손 논쟁으로 계속 지연되다가 2002년이 돼서야 신축 부지를 20m 옮기는 것으로 합의하여 건축 협의를 통과하였다. 또 2003년 11월에 완공한 대학원기숙사는 원래 18층으로 설계하였으나, 서울시의 심의를 거친 후 9층으로 조정하였다. 이는 대학 건축 계획에 대해서도 시의 심의를 받도록 관련 법이 2000년 7월 개정된 뒤 취해진 사전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었다.

개발과 보존의 문제는 해묵은 주제인 듯하나 관악산 기슭에 위치한 서울대학교로서는 계속되는 시설 수요 증가를 충족하면서도 캠퍼스 내 교육 연구 환경이나 캠퍼스 주변 자연환경, 또는 지역 환경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 이 문제는 이미 종합캠퍼스를 구상하고 건설할 당시부터 전제가 된 문제이자 앞으로 해결해야 할 근본 과제이기도 하다. 앞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애초에 서울대학교 종합캠퍼스 마스터플랜이 구상한 다음과 같은 특성들은 대부분 인간과 환경을 먼저 고려한 것이었다.

1. 외부 차량 동선과 내부 보행자 동선의 분리
2. 축을 이용한 중심 공간 배치
3. 지형에 순응하는 저층계획
4. 마당 중심의 건물 배치

그러나 현재 중앙도서관-본부-광장으로 이어지는 축은 전체 캠퍼스의 중심으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있고, 인도와 차도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곳들도 여럿 있다. 또 추가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 건물 증축 및 고층 개발 또한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현재 서울대학교가 직면한 환경 관련 문제들은 이처럼 최초의 원칙들이 하나하나 무너져간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새로운 원칙은 무분별한 계획보다는 환경에 대한 인식 전환을 통해 가능하다. 인식 전환이 어떻게 가능한가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그 변화의 단서들은 이미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이번 1995년도 백서작업의 시설/환경분야에서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했다. 첫째는, 대학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했다. 대학시설을 교육 연구 시설과 지원시설 등을 포함하는 '시설'과 다른 한편으로는 오픈스페이스, 교통 및 주차공간, 공급처리시설 등을 포함하는 '환경'으로 크게 구분을 하여 그 동안 우리 대학에서 간과되어 왔던 오픈스페이스, 교통, 주차공간 등의 '봉사하는 공간'(Serving Space)에 대한 정당한 관심을 가지려고 시도했다. (서울대학교, 『1995년도 대학백서』, 145쪽)

『대학 백서』는 1993년도까지 '시설'이라고 되어 있던 항목을 1995년 이후 '시설과 환경'으로 바꾸었다. 위의 인용문은 이와 같은 변화 배경을 설명하는 부분이다. 이전에도 환경을 고려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위 글은 이제 '환경' 문제를 '시설' 문제만큼 중요한 항목으로 간주하기 시작하였음을 보여 준다.

최근에 발표된 『관악 캠퍼스 재건축 및 조경 마스터플랜에 관한 연구』(2004년)는 캠퍼스 개발과 친환경 캠퍼스라는 개념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캠퍼스 재개발 계획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의 개발 방식대로라면 캠퍼스 녹지 공간은 계속 줄어들 것이고 자연 환경은 훼손될 것이 자명하였다. 그러나 재개발 방법은 이미 조성된 대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하므로 새로운 녹지 훼손 가능성이 적으며, 더 나아가 기존 캠퍼스 공간 구조의 재편을 통해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토지 이용 효율을 높인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캠퍼스 공간 구조를 ① 학문 권역 ② 교류 권역 ③ 환경 권역 ④ 동선 권역으로 구분하여 대학 시설 재배치를 통한 구조화 작업을 실행하는 한편, 각 항목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 수립을 제안하였는데, 이처럼 '환경'을 하나의 권역으로까지 설정한 경우는 이전 계획에서는 찾아 볼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기존 캠퍼스 공간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대안으로 법적 한도 안에서 고층



개발을 추구하되 지하 공간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처럼 새로운 캠퍼스 마스터플랜은 녹지를 줄이면서 필요한 수요를 확보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녹지를 확보하면서도 동시에 시설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환경을 중시하는 전 세계적 경향과 무관하지 않은데, 이 흐름을 대표하는 개념이 바로 ‘에코캠퍼스(Eco-campus)’이다. 이 개념은 1990년 탈루아르 선언(Talloires Declaration)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당시 환경 파괴에 대한 위기의식이 팽배한 가운데, 전 세계 22개 대학교 총장들이 모여 대학이 환경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는 선언을 하였다. 그리고 2년 뒤 브라질 리우 회의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이 인류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이념이며, 이러한 이념을 확산하기 위해 대학이 핵심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후 탈루아르 선언에 가입한 대학들이 점점 늘어 2004년에는 300개 대학이 되었고, 유사한 선언과 국제 협력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국내에서도 고려대학교(중앙광장 및 1백주년기념관), 국민대학교(차 없는 캠퍼스 만들기, 녹색 캠퍼스 운동), 중앙대학교(담장 허물기) 등에서 시작한 친환경 캠퍼스 조성 움직임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최근에는 숭실대학교, 서강대학교와 같이 공간 부족에 시달려 왔던 도심형 캠퍼스들이 타 지역으로 진출하거나 지하 공간을 개발하는 등의 방법으로 숨통을 틔우겠다는 계획을 속속 실천하고 있으며, 이화여자대학교도 캠퍼스 지하를 개발해 교육·연구·문화 시설을 확충한다는 이른바 이화·삼성캠퍼스센터(ESCC)프로젝트를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다.

서울대학교의 경우 정운찬 총장은 2003년 10월의 개교 기념 행사에서 에코캠퍼스 조성을 공식화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 캠퍼스 주변의 자연환경은 세계 어느 대학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러나 캠퍼스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이 훌륭한 자연환경을 훼손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캠퍼스는 자연을 밀쳐내며 자리를 넓혀 갈 것이 아니라 캠퍼스 속으로 자연을 끌어들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우선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관악 캠퍼스를 보행 중심의 에코캠퍼스로 가꾸어 나가기 위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걷고 싶은 거리’는 정문-미술관-경영대학-멀티미디어 강의동(83동) 앞-음악대학·미술대학-자하연-중앙도서관-공과대학 안마당(붉은 광장)-공과대학 폭포까지 이



그림 1-1-63 '에코캠퍼스'의 첫걸음, '걷고 싶은 거리' 지도

어지는 총 2Km 정도의 통행로 건설을 목표로 삼았다. 2005년 7월 15일에 착공하여 같은 해 10월 25일에 우선 경영대학에서 자하연에 이르는 1단계 구간을 개통하였다. 공사 중에는 자하연 옆 계단 등에 장애 학생 이동권 보장을 위한 배려가 부족하고 공사 과정이 친환경적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공사를 학기 중에 진행해 공사 현장 주변 통행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걷고 싶은 거리' 개통 이후 학생들은 깔끔하고 잘 가꾸어진 조명 시설과 보행자 우선 공간 활용 등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밖에도 본부는 방치하여 메말라 가던 캠퍼스 내 생태 환경인 버들골 습지를 복원하였으며, 대학신문사가 주관하는 '에코캠퍼스 캠페인'은 관악 캠퍼스의 친환경성을 높이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에코캠퍼스는 물리적 친환경성 범위를 넘어서야 한다. 친환경적인 건물과 조경, 에너지 및 자원 사용 최적화, 각종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 등이 에코캠퍼스의 핵심 요소들인 것은 분명하지만, 친환경적 인재들을 양성하여 그들이 미래 사회의 친환경성을 높이는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대학의 핵심적 역할이다. 에코캠퍼스란 그저 아름다운 대학 교정을 일컫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가 지역 공동체의 일원임을 자각하여 주변 환경을 독점하지 않고 더욱 아름답게 가꾸려고 노력할 때, 서울대학교 캠퍼스는 누구나 부러워하는 에코캠퍼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서울대학교는 정문부터 관악로 고개 철조망 울타리를 제거하고, 대신 그 자리에 나무를 심고 벤치를 배치하여 인근 주민들의 휴식터로 만들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진정한 에코캠퍼스가 될 서울대학교의 미래를 기대한다.



## 제2장 대학의 심장, 도서관

### 제 1 절 초창기 도서관

#### 1) 도서관 설립

1945년 10월 17일 미군정 법령 제16호에 의거하여 '경성제국대학'의 명칭을 '경성대학'으로 변경하였고, 이와 함께 경성제국대학 도서관을 경성대학에 귀속시켰다. 1946년 8월에는 또 '국립서울대학교설립에관한법령'에 따라 '경성대학'을 '국립서울대학교'로 바꾸면서 도서관은 이제 '국립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이 되었다.

해방과 함께 도서관 관리와 운영은 한국인이 직접 맡았다. 그러나 독자적인 도서관 관리 경험이 전무한 상황에서 순식간에 한국인 나름의 운영 체제를 갖출 수는 없었다. 건물, 설비, 장서, 도서 분류법 등은 물론이려니와 직원들도 일본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여전히 자리를 지켰다.

〈그림 1-2-2〉는 1956년도 『서울대학교 요람』에 수록된 「서울대학교 소속 기관 조감도」인데, 대학로를 사이에 두고 문리과대학 캠퍼스와 의과대학 캠퍼스가 서로 마주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오른쪽 문리과대학 캠퍼스에서 3번이라 붙여진 건물이 바로 도서관



그림 1-2-1 동승동 문리과대학 캠퍼스의 도서관 전경

이다. 이 건물은 1927년에 일부 준공하여 1930년에 제2서고를 완성한 경성제국대학 부속 도서관 건물을 그대로 인수한 것이다. 관악 캠퍼스로 이전하는 1975년까지 일부를 증축했을 뿐 거의 그대로 사용했는데, 현재 이 건물은 옛 문리과대학 캠퍼스에 마로니에 공원이 들어섬에 따라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서울대학교 창설 당시 도서관 내부 시설은 <그림 1-2-3>의 경성제국대학 부속 도서관 평면도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도서관은 철근 콘크리트 2층 건물로 법문학부 연구실과 함께 사용했는데, ‘하계(下階)’라 표시된 1층에는 관장실, 사서관실, 서고, 제본실, 법문학부 연구실 등이, ‘상계(上階)’라 한 2층에는 서고, 법문학부 연구실과 각종 열람실이 배치되었다. 당시 총 열람석 수는 분명하게 밝혀져 있지 않지만, 한국전쟁 이전 도서관 열람석이 100석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기록을 볼 때, 경성제국대학이나 경성대학의 도서관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초대 도서관장인 김진섭은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에서 1928년부터 촉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었다. 1947년 6월 10일부터 몇 달 동안 김진섭 관장 직무 대리를 역임한 김구경 초대 부관장도 한때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에서 고원으로 일한 경험이 있다. 단적인 예지만 이러한 사실은 건물과 시설 면만이 아니라 인적인 차원에서도 경성제국대

학의 영향이 지대했음을 말한다. 이러한 인적 전통은 제2대 이병도 관장이 취임하면서 비로소 일부 단절되었다.

서울대학교 도서관의 초창기 장서 내용을 살펴보면, 대체로 사료 및 법문학부 서적을 비롯하여 사회과학계와 인문과학계 도서가 주를 이루었다. 이것은 경성제국대학 창설 당시 법문학부와 의학부만 있었는데, 의학부는 따로 도서관이 있어서 본관에는 법문학부 각 과 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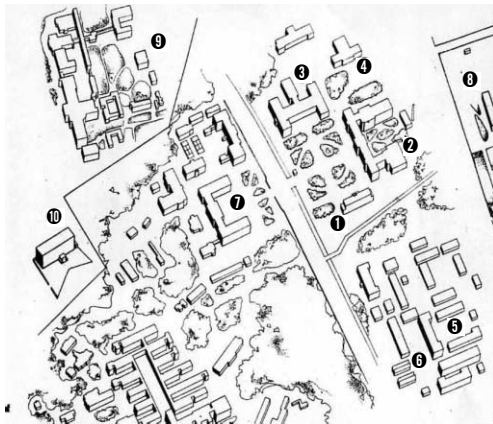


그림 1-2-2 1956년도 「서울대학교 요람」에 실린 「서울대학교 소속 기관 조감도」

수와 학생들 연구에 필요한 자료들을 주로 수집해 놓았기 때문이다. 서울대학교 도서관 설립 당시 총 장서는 60만 권 정도였다.

장서는 편의상 구장서(해방 이전 수집한 자료)와 신장서(해방 이후 수집한 자료)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미 군정기와 정부 수립 초기에는 신장서라 할지라도 경성제국대학 방식 그대로 정리하였고, 반대로 해방과 전쟁의 혼란 속에서 구장서 중 일부를 신장서 방식대로 정리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사실상 구장서와 신장서의 구분은 모호하였다.

장서인은 1926년부터 1946년 4월까지 사용해 오던 ‘경성제국대학도서관(京城帝國大學圖書館)’을 1946년 5월부터 ‘경성대학도서관(京城大學圖書)’로 바꾸었으며, 1954년 3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서울대학교도서관(서울大學校圖書)’를 사용하고 있다.

1948년 대한민국 수립과 함께 서울대학교 부속도서관은 국립대학교 중앙도서관으로서 온전한 역할을 할 수 있었다. 1949년 11월 5일에는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08호) 제정으로 사서직을 법으로 인정하였으며, 1949년 12월 31일에는 교육법 법률 제86호 공포에 따라 ‘국립서울대학교’를 ‘서울대학교’로 개칭하였다. 이에 따라 ‘국립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또한 ‘서울대학교 부속도서관’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 2) 한국전쟁과 도서관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순식간에 서울이 점령되자 서울대학교 도서관 또한 피난할 수밖에 없었다. 수많은 장서 특히 규장각의 국보급 문화재를 그대로 남겨 두고 피난길에 올랐다. 그래도 미처 피난하지 못한 직원들에 의해서 국보급 장서들이 일부 복원된 것은 불행 중 다행이었다.

같은 해 9월 한국군과 유엔 연합군이 서울을 탈환하자 북한군은 철수하면서 규장각 도서관도 옮겨 가려 하였으나 사세가 급박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후 서울대학교 부속도서관은 전세의 변화로 1·4 후퇴 때 다시 피난길에 오르게 되자 규장각 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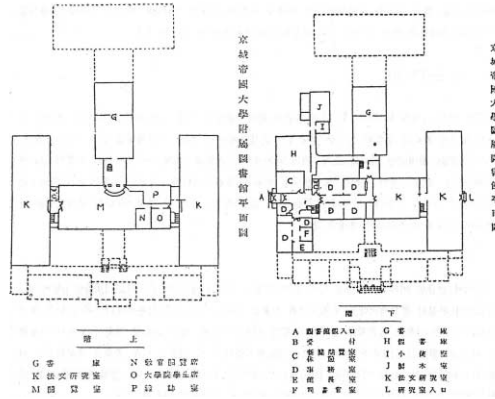


그림 1-2-3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 평면도

같은 귀중본들을 본격적으로 소개하였다.

1950년 12월 10일 이병도 도서관장의 지시에 따라 1차로 『승정원일기』 3,045책을 부산에 소개하여 부산 관재처(부산시 광복동 소재) 창고 4층에 국립박물관, 민속박물관, 덕수궁박물관, 국립도서관 등의 도서와 함께 보관하였다. 2차로는 22일에 김두중 서울대학교 부속병원장의 지시에 따라 『조선왕조실록』(강화본) 1,188책 및 『일성록』 2,329책을 부산에 소개하여 경남대한부인회(부산시 대교동 소재) 하층 창고에 보관하였다. 3차로는 28일 도서관 사서 호기현의 주도로 『조선왕조실록』(태백산본) 864책과 『비변사등록』 273책을 부인회 창고로 이송하였다. 이후 1차로 소개하였던 『승정원 일기』를 경상남도 내무국 회계과 제2창고를 차용하여 이송하였고, 동시에 부인회 창고에 보관한 2차분 소개 도서 및 3차분 소개 도서 전부도 경상남도청 창고로 이송하여 보관하였다.

1951년 9월 전시연합대학 체제 하에서 임시로 도서관을 개관하였다. 임시 도서관은 부산시 동대신동 구덕수원지 뒤편 문리과대학 가교사 옆에 학생열람실, 사무실, 숙직실 등을 갖춘 약 80여 평의 목조 가건물로 신축하였다. 피난지 도서관은 겨우 열람 및 대출 업무만 볼 수 있었고, 예산은 인건비와 신문 구입비를 겨우 충당할 수 있는 정도였다. 경상남도청에 보관한 규장각 도서를 봄과 가을에 한 번씩 포쇄(曝曬)하는 것이 이 당시 그나마 가장 큰 사업이었다고 한다.

각 대학이 독자적인 수업 태세를 갖추에 따라 1952년 5월 31일 전시연합대학을 해체하였으며, 9월 4일에는 법과대학 정광현 교수가 제3대 관장으로 취임하였다. 이에 따라 도서관도 제 면모를 갖추기 위해 애를 썼지만 제반 여건은 너무 열악하였다. 유엔한국재건단(UNKRA) 원조로 1953년 5월 11일에 원조 도서 1차분인 39,200권이 도착하여 이 가운데 12,500권을 서울대학교에 배정하였으나 이러한 원조도 넉넉한 것은 아니었다. 『대학신문』 1952년 11월 10일자에서 한 학생이 ‘운동장도 대강당도 필요하지만 도서 그리고 열람장이 우리 대학생들에게는 더욱 필요한 것이다. 도서 열람장을 즉시 확

장 증설하라’고 한 요구는 당시의 열악한 상황을 잘 보여 준다. 1953년 7월 25일 국문학과 방종현 교수의 부인인 이해라 여사가 책 5,000여 권을 기증하면서 책에 대한 갈증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었다. 이후에도 수입(受入) 도서의 상당 부분은 주로 기증에 의존하였다.



그림 1-2-4 전쟁 당시 소개지 부산에서 임시로 개관한 도서관 전경

서울대학교 부속도서관은 1953년 8월 7일 정부 환도에 따라 복귀 작업을 준비하기 위해 도서관 업무를 일시 중지하였다. 한 달여 뒤인 9월 16일 서울로 복귀하여, 10월 15일에 미8군에게서 학교를 정식 인수하였으며, 재건 작업과 도서관의 장기 발전을 위해 총장 직속으로 '도서관위원회'를 두었다.

도서관 재건 작업은 순탄하지 않았다. 전란으로 입은 막심한 피해에 비하여 복구할 인원이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였다. 여기저기 흩어진 70만 권의 도서를 수습하고 서가에 정리하여 도서 카드를 정비하는 엄청난 일을 불과 직원 아홉 명이 불철주야 감당해야 했다. 각고의 노력 끝에 2달여 만인 12월 1일에 굳게 닫혔던 도서관 문을 활짝 열 수 있었다.

서울로 돌아온 이후 본격적인 도서관 재건을 위해 직제 개편이 있었으나, 재건의 필수 요건인 예산과 인원은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나 여전히 턱없이 부족했다. 서울대학교 총 예산의 1% 내외가 도서관 예산이었으며, 그중 약 30% 정도가 도서 구입비였다. 1954년 6월 한미재단에서 도서관 부흥비로 3,500달러를 기부하고, 『뉴욕타임스』 외 10종의 신문, 잡지 및 교보(校報) 등을 기증하였다. 또 동년 9월 28일에 미네소타 프로젝트가 확립되어 법과대학 도서관 신축, 사범대학과 미술대학의 학술 서적 구입에 도움을 받기도 하였는데, 1955년부터 1961년까지 총 도서 구입비는 약 14만 달러에 달하였다.

그러나 이 정도 예산으로는 정상 운영을 기대할 수 없었다. 1959년 9월 말 본관 장서 수는 총 594,597권으로, 해방 후 14년 동안 수증·구입한 것은 겨우 34,797권에 불과하였다. 그나마도 열악한 예산 때문에 구입보다 수증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1957년도 자료 수집 현황을 보면 단행본의 경우 81%가 수증 도서이고, 구입 도서는 겨우 19%에 불과했다. 그런데 방종현 교수가 기증한 도서를 '일사(一叢) 문고'로 지정한 것은 이후 도서기증의 기폭제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도서관이 재개관하자 열람자의 이용과 요구도 커졌다. 1953년 12월 개관 당초 하루 수 명에 불과하던 열람자가 날로 증가하여 1954년 4월 한 달 동안 총 3,630명이 8,727권을 열람했다. 그러나 날로 고조된 독서열에 비하여 열람석, 장서, 봉사할 직원이 턱없이 부족하였으므로 이용자들의 불만은 증폭하였다.

당시 『대학신문』에 게재된 학생들의 불만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13,000명 학생에 열람석이 226석에 불과하다.

2. 카드가 일본어로 정리되어 있어 찾기 어렵다.
3. 좌석을 기다리다 자리를 잡지 못한 많은 학생이 방황하고, 들어간 학생도 부실한 난방 장치 때문에 추위에 고생한다.
4. 새 책이 서점보다 적다.
5. 신문·잡지·학술지 등이 부족하고, 참고봉사 등이 없다.('대학신문' 1956년 2월 6일자)

그리고 이보다 조금 늦은 시기에 『대학신문』에 실린 「도서관 운영의 재검토」라는 사설은 다음과 같이 도서관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1. 대학당국의 도서관 인식변화 요망: 도서관 총예산 800여만원 가운데 비품비를 합한 도서구입비가 150여만원(타기관 도서구입비, 국회도서관 1억 8천만원, 한국은행 7천만원, 교통부 3천만원)에 불과
2. 사서수가 1만권당 한 사람은 되어야 하는데, 반에도 미치지 못함.
3. 도서가 단과대학 도서관과 과 연구실, 교수 연구실 등에 분산되어 있음. 심한 경우는 한 과에 수천권, 한 교수 연구실에 오륙백권이 장기대출되어 반납되지 않고 있음.
4. 미국에서 파견된 전문가와 협조하여 카드와 목록의 정비를 요망함.('대학신문' 1956년 7월 2일자)

이 시기에 각 단과대학은 자체 도서관 또는 도서실을 운영했다. 그러나 본관 도서관과 단과대학 도서관 사이에 아무런 연계도 없어 가뜩이나 부족한 도서관 예산이 이리저리 쪼개져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1955년에 처음으로 도서관 종합화 방안이 제기되었고, 이후 미네소타 프로젝트의 지원으로 1956년 6월 11일부터 9월 7일까지 약 3개월 간 한국에서 활동한 오스트볼트(Harald Ostvolt)가 다시 종합화방안을 주장하였다.

미네소타대학교 농과대학 도서관장 오스트볼트는 도서관 전문가로서 서울대학교 부속도서관 현황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도서관 직원을 교육하는 임무를 맡았다. 그는 한국에 머무는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서양서 목록 작성과 분류 원칙, 도서관의 운영 요소를 부속도서관 직원에게 가르치는 데 보냈다. 그는 도서관 운영과 기술적 측면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미네소타 프로젝트와 관련한 세 단과대학의 도서관, 즉 농과대학, 공과대학, 의과대학의 도서관 재건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는 미국으로 귀국한 다음 『서울대학교 도서관: 오스트볼트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였는데, 그는 보고서에서 기본적으로 전 대학에 걸친 강력한 조직 체계가 없다면, 아무리 많은 책과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대학 도서관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수입 도서 및 도서 정리용 인쇄물 일체를 중앙도서관으로 종합할 것, 대학 예산의 도서비를 관장이 관리할 것, 직원의 진출, 고용, 해고 등을 관장이 전관할 것, 중앙도서관을 확장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후술하겠지만 1960년대 중반에는 도서관이 분관 체계를 갖추에 따라 각 단과대학 도서관은 본관의 분관이 되어 본관과 분관 간의 연계성을 제고하게 되었다.

### 3) 도서관 정비

목록 및 색인 등의 정보 제공 외에도 도서관 실태와 개선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1963년에 『도서관보』가 창간되었다. 아래 창간사는 1960년대 도서관 정비를 위한 노력이 어떠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는가를 잘 보여 준다.

대학도서관은 대학의 심장이다. 따라서 그 존립의 사명은 대단히 크다. 우리 대학교의 목적은 우리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광범정밀한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는 동시에 협동정신의 풍부한 지도자적 인격을 도야함에 있는 것인 만큼 본 도서관은 이와 같은 대학교의 원대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더욱이 신생국가의 발전을 위한 교수와 연구에 봉사한다고 하는 중대한 사명을 띠고 발족하였다. 그것도 어언 18년이나 된다. 그렇다면 그간 우리 도서관이 그 사명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을까?

이러한 자성에서 시작한 도서관 정비 작업은 도서관 조직을 개편하는 일로부터 시작하였다. 1949년 11월 5일 ‘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제208호)을 제정함에 따라 사서직을 사서관(3급 갑류 및 을류)과 사서(4급 갑류 및 을류)로 인정한 후, 1961년 4월 15일 ‘공무원임용령’ (국무원령 제204호)을 개정하여 사서직급을 3급 갑류는 사서관, 3급 을류는 사서관보, 4급 갑류는 사서, 4급 을류는 사서보로 개정하였다. 또한 동년 5월 4일에는 ‘국립학교설치령’ 중 일부를 개정하여(국무원령 제254호) 도서관 직제와 직무에 관한 내용을 추가 신설하였다. 서무과·사서과·열람과의 3과를 두고, 서무과장은 사무관, 사서과장 및 열람과장은 사서관이 맡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였다. 이로써 도서

관 직제와 직무가 처음으로 법제화되어 본격적인 행정 체계를 갖추었다.

조직 정비는 업무 정비를 가져왔다. 여러 내규를 제정 또는 개정하고 여러 위원회를 신설하였다. 1961년 9월 29일 종전 규정을 전면 폐지하고 새로 '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 규정' (서대총 제1782호)을 제정하였고, 1962년 11월 본관에 소장된 국보급 귀중 도서인 규장각 도서의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규장각도서위원회'가 발족했다. 한편 더 효율적인 자료 수집을 위하여 기존의 도서관위원회와 별도로 1962년 6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수집도서선정위원회'를 발족하였다. 이 위원회는 사서과장을 위원장으로, 각 과 과장과 관장이 위촉한 직원들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했는데, 도서 수집 및 도서 선정에 관한 제 사항을 심의하거나 관장에게 건의하는 일을 맡았다. 1967년 도서관에서 소장한 귀중 도서를 영인·간행하기 위하여 도서관장을 위원장으로 한 '재단법인 서울대학교 학술연구재단 고전간행위원회'가 발족했다.

한편 1965년 7월 9일 '국립학교설치령'을 개정(대통령령 제2171호)하여 인문·사회계와 자연 과학계 출판물 조사와 간행을 위한 조사과가 신설되었고, 1966년 1월 1일 '서울대학교 위임전결사항규정' (서울대학교훈령 제1호)을 제정하여 관장 및 과장의 전결 사항을 명확하게 정했다. 또 동년 2월 21일 '서울대학교사무분장규정' (서울대학교훈령 제16호)의 제정으로 분관, 각 과, 각 계의 업무 분장을 엄밀히 규정하였다.

또 이 시기 중요한 변화로 1966년 '부속도서관분관규정' (서울대학교 규칙 제418호)의 제정을 들 수 있다. 이로써 도서관에 공학도서관, 교육도서관, 농학도서관, 문리도서관, 미술도서관, 법률도서관, 상경도서관, 약학도서관, 의학도서관, 음악도서관, 치의학도서관, 행정도서관 등 총 12개 분관을 두게 되었고, 1968년 3월 신문도서관과 교양도서관을 추가하여 그 수는 14곳으로 늘어났다. 사실 본관과 각 단과대학 도서관의 상호

연계성을 제고할 필요성은 1950년대 이후 줄곧 제기되었는데, 이용자 편의로 보나 업무 및 자료 활용의 효율성으로 보나 도서관 종합화는 절실한 과제가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실질적인 도서관 종합화는 1975년에 도서관이 관악 캠퍼스로 이전하면서 이루어졌다.

1960년대에는 법과대학, 공과대학,



그림 1-2-5 서울대학교  
부속도서관 분관 공학도서관

사범대학, 의과대학 등 각 단과대학 도서관을 신축하고, 농과대학 도서관 등을 증축하였으며, 본관은 1963년 7월 31일 별관 서고를 단층 건물에서 이층 건물로 증축하여 정기 간행실, 제본실, 열람실을 확충하였다. 한편 1973년 3월 지은 지 채 10년도 되지 않은 사범대학 도서관이 붕괴 위기에 놓이자 열람실 사용을 금지하고 보수 공사를 하였다.

이와 같이 직제 개편과 시설 확장을 했는데도 도서관 업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직원 수가 크게 모자랐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관 직원 수를 지속적으로 증원하였다. 1960년에 직원은 정식 직원 11명, 임시 직원 23명에 불과하였으나, 1963년에는 정식 직원 28명, 임시 직원 9명으로 총원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불안정한 고용 환경으로 인해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던 임시 직원 중 다수가 정식 직원이 되었다. 또 1960년대 후반에는 총원이 60명에 이르렀고, 1972년에는 100명을 넘어섰다. 이때 정식 사무직원이 52명, 정식 노무 직원이 28명, 임시 직원이 22명이었는데, 이는 10여 년 전에 비해 정식 사무직원 수가 8, 9배, 정식 노무 직원의 수가 5, 6배 늘어난 것이다.

또한 본격적인 도서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원 확보 못지않게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 시기에 비로소 도서관 업무를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적으나마 예산을 확충했기 때문이다. 1960년에 130여 만 원에 불과하던 예산은 다음 해에 4배에 육박하는 480여 만 원이 되었고, 1966년에는 다시 800여 만 원이 되었으며, 1971년에는 3천여 만 원, 다음해에는 9천여 만 원이 되었다. 불과 10여 년 사이에 무려 70배에 이르는 예산 증액이 이루어졌다.

학생 수가 1,000명에도 이르지 않던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에도 50명에 이르는 직원이 있었음을 상기한다면, 학생 수가 2만 명에 육박하는 서울대학교 부속도서관에서 이와 같이 예산과 인원이 증가한 것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니었다. 이는 오히려 1950년대 이전 상황이 매우 열악했음을 반증해 줄 뿐이다.

그러나 예산과 직원의 대폭 확충이 도서 구입비 증액으로 곧바로 이어지지는 못하였다. 현상 유지도 힘든 상태에서 예산이 증액되자 우선 긴급을 요하는 유지와 보수에 예산을 투입했다. 도서 구입비는 1972년에 와서야 어느 정도 숨통이 트였다. 그 이전까지 도서 수입은 여전히 구입보다는 원조나 기증이 많았다. 1963년 8월 국문학과 이병기 교수가 장서 4,300권을 기증했다. 그리고 1970년에 사회학과 이상백 교수와 동양사학과 김상기 교수의 도서를 기념 문고로 유치하기 위하여 '문고도서심의회'를 구성하였으나, 교섭 도중 사무상의 문제로 김상기 교수의 장서 1만여 권은 인수하지 못하였고,

이상백 교수의 장서 6,400책만을 상백(想白)문고로 인수할 수 있었다.

이처럼 조직을 정비하고 예산과 인원을 확충하는 한편 각종 도서 정리 규칙을 마련하면서 도서 정리 업무도 본격적으로 착수할 수 있었다. 도서를 점검하여 색인과 목록을 만들고 이를 간행하였는데, 그 가운데 특히 중점을 두어 추진한 사업은 규장각 소장 귀중 도서의 정리였다. 1962년의 '규장각도서위원회', 1965년의 조사과, 1967년의 '재단법인 서울대학교 학술연구재단 고전간행위원회' 등의 설치는 사실상 귀중 도서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업은 다행히 하버드대학교 연칭연구소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비교적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규장각 도서를 4부법(經史子集)에 따라 분류했는데, 고서 목록은 고서계에서 작성한 「고서편목판람」을 참조하였고, 후에는 1966년에 발간한 「고서목록규칙」에 따라 정리하였다. 고문서 정리는 1958년과 1959년 장지태와 박병호가 기초 정리를 한 이래, 1964년부터 동아문화연구소의 협조를 얻어 다시 가정리 작업에 들어갔다. 1964년 9월 1일부터 1965년 5월 31일까지 전체 약 5만 2천여 매 중에서 27,616매를 정리하였고, 1966년까지는 약 3만 건을 정리 완료하였다. 이 작업은 1959년에 완료한 고문서 정리 작업을 재정리한 것인데, 이전에는 관련 문서를 장수 불문하고 한 봉투에 넣는 방식이었다고 한다면, 1966년 작업은 문서 하나를 한 봉투에 넣는 방식이었다. 1969년부터는 규장각 장서 점검과 아울러 조선총독부 도서 번호표를 서울대학교 도서 번호표로 바꾸는 규장각 도서의 도서 번호표 개점 작업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1972년에야 완료했다.

귀중 도서 정리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에는 일반 도서 정리 작업도 벌였다. 1963년 9월 본관 및 각 대학 도서관 장서의 종합 목록 작성 계획을 수립했다. 이는 본관과 각 단과대학 도서관의 상호 관계를 제고하여 도서관 종합화로 나아가는 첫걸음이었다.

종합 목록 작성 작업과 발맞추어 서가 목록의 복구와 이를 근거로 한 장서 점검 작업도 일부 이루어졌다. 1964년 말 서양서 서가 목록을 정비하였고, 이를 근거로 장서 실태를 어느 정도 파악했다. 이후 직원 두 명을 고정 배치하여 구간 동양서의 서가 목록 정비 작업도 박차를 가하였다. 이 작업은 1965년 1월부터 다음 해 11월까지 총 285,315책을 정비함으로써 완료하였다.

한편 1965년 신설된 조사과는 연구자들의 도서관 이용도를 높이고 학술 연구에도 도움을 주기 위하여 외국 학술잡지 기사색인 발간 사업을 추진하였다. 또 정보 제공자로서 도서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1967년에는 『학술 문헌 속보』(인문사회과학

편, 과학기술 편)를, 1974년에는 『신착 도서 속보』를 창간하여 교수 및 분관에 배부하였다.

## 제 2 절 도서관의 종합화와 그 이후

### 1) 종합화 계획과 관악 캠퍼스로의 이전

서울대학교 종합화를 위한 ‘서울대학교 종합10개년계획(1968~1977년)’의 추진에 따라 도서관도 그에 걸맞은 체제를 갖추고자 하였다. 종합화 계획의 자문 역할로 1968년에 내교한 알터(Chester M. Alter)의 종합화 계획안에서도 이미 도서관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룬 바 있는데, 이후 종합화 계획도 도서관 발전을 계획의 중심에 두었다.

도서관 발전 계획은 서울대학교 기획위원회에서 입안하여 1971년 발표한 『교육 연구 및 기구 조직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 이 보고서는 ‘도서관은 중앙 도서관과 분야별 도서 분관을 두는 이원적 조직을 유기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규장각 도서와 기타 전문도서 분관에 관한 사항은 분류 및 규모를 시설계획과 관련하여 별도 연구키로 한다’고 하여 도서관의 구체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할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또 1972년 9월에 발표한 『종합캠퍼스 기본설계 건축보고서』는 ‘도서관은 마스터플랜에서의 위치로 보나 그 기능으로 보나 전체 대학의 핵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 아카데미적이고 연구적인 역할 뿐만 아니라 심볼 존에 위치한 도서관의 외관은 좀 웅대하고 위용을 갖고 상징적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아세아재단의 지원을 받아 새 도서관 건설 계획을 발전시킬 목적으로 1972년 4월 3일부터 같은 달 15일까지 내교한 마틴(Louis E. Martin, 워싱턴연구도서관협회 부책임자)은 1972년 5월 자신의 의견을 보고서 『서울대학교 도서관 운영에 관한 보고서(The Librarie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 Statement on Management)』로 제출하였다. 마틴은 이 보고서에서 서울대학교 도서관 운영이 실로 한심한 상태라면서 앞으로 커다란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도서관이 대학의 교육과 연구에 적극적으로 증용할 수 있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신중히 검토하여 전통적 방식을 버리는 동시에 외국 도서관의 효과적인 운영 방식을 배워야 하며, 대학 도서관의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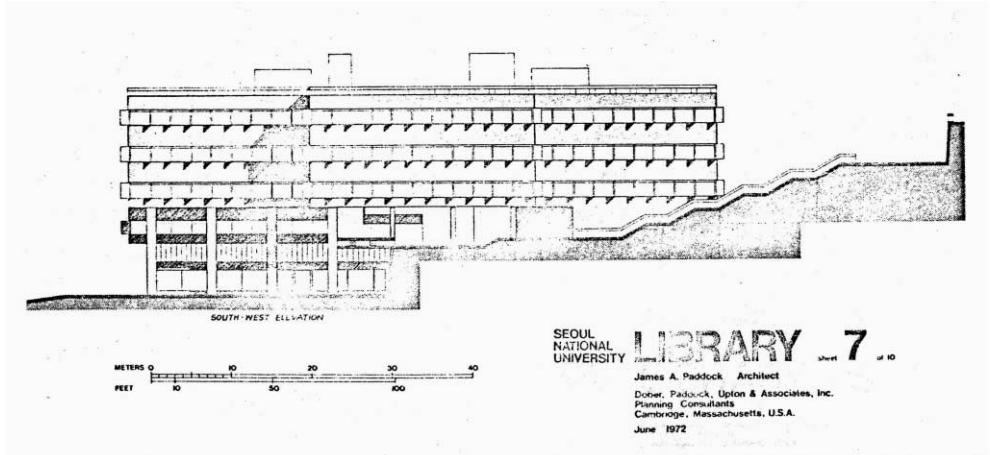


그림 1-2-6 1972년 패독(James A. Paddock)이 설계한 관악 캠퍼스의 새 도서관 단면도

서, 봉사, 행정의 기능을 단일 조직 체계로 종합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리고 도서관 종합화를 위해서는 계획뿐만 아니라 교수들에 대한 설득 또한 필요하며, 농과대학교 의과대학에 분관을 두는 것은 좋으나, 그 이외의 건물에는 소규모 도서실조차 용납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이만갑 관장은 1972년 12월 『마틴 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이만갑 관장은 '마틴의 보고서를 분석·검토하여 본 바 매우 진취적인 건의라고 믿는 바이며 따라서 그의 제언대로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본인의 간절한 소망이다' 라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인 면을 고려할 때 조속히 이루어질 수 없는 점들이 있다면, 예를 들어 전문직 사서를 관장으로 임명하는 문제, 관악 캠퍼스로 이전과 함께 모든 부서에 사서를 충원하는 문제, 국립 도서관의 정보 체제 일원화 문제 등을 거론하였다.

한편 서울대학교 종합캠퍼스 마스터플랜 작업을 위해 내교한 캠퍼스용역단 DPUA(Dober, Paddock, Upton and Associates, Inc.)는 1971년 말 캠퍼스 마스터플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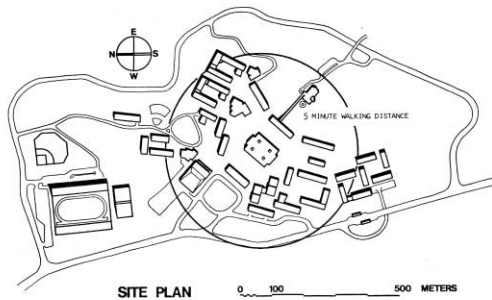


그림 1-2-7 미국의 캠퍼스용역단 DPUA가 작성한 캠퍼스 배치도. 『서울대학교 도서관: 프로그램과 디자인』(1972년)에 수록. 새 도서관이 캠퍼스 대부분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도록 배치하였다.

을 완성하자, 도서관 자문역인 마틴과 함께 도서관 실태를 주의 깊게 조사한 후, 1972년 6월 도서관 건설을 위한 종합계획 보고서인 『서울대학교 도서관: 프로그램과 디자인(Library: Program & Design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는 새 도서관을

아래 인용문과 같이 설명하였는데, 이를 볼 때 새로운 종합캠퍼스에서 도서관은 기능적 역할에서뿐만 아니라 공간적으로도 말 그대로 ‘대학의 심장’ 으로서 위치하였다.

새로운 도서관은 심미적으로나 기능적으로나 배치도상 가장 주요한 건물이다. 새로운 도서관은 또한 새로운 캠퍼스에 세워질 가장 거대한 건물이자 명문 국립대학의 학술적 미래를 위해 핵심적인 곳이기도 하다. 침부한 도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도서관은 캠퍼스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보행순환시스템의 결절점을 이룬다. 캠퍼스 대부분은 도서관으로부터 걸어서 5분 내 거리에 있다.

1974년 3월 30일 종합캠퍼스 건설을 위한 1단계 공사 마무리와 함께 도서관도 완공되었다. 새 도서관은 총 9,244평의 6층 건물로 내부는 냉난방 시설을 갖춘 약 4천 석의 열람석과 150만 권의 장서를 보존할 수 있는 서고 및 기타 시설 등을 갖추었다. 도서관 1층과 2층에는 규장각이 자리 잡았고, 3층에는 자유 열람실, 기본 도서실, 기계실 등이 위치하였으며, 4층에는 참고 열람실인 제1열람실과 마이크로 필름 열람실, 정기 간행물 열람실, 복사실 등이 들어섰다. 그리고 5층에는 교수 및 대학원생 열람실과 제2·3·4 열람실, 법률자료실이 들어섰고, 6층에는 제5·6·7열람실과 학위논문실, 특수 자료실 등이 자리하였다.

도서관 이전을 위한 준비는 새 도서관이 세워지기 1, 2년 전부터 시작했다. 도서관 이전작업은 단순한 물리적 이동에 그치지 않고 자료 기록 및 대출 등 이용자 관련 사항과 여러 가지 진행 중인 업무까지도 함께 이전하는 것이었으므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사전 준비가 필요했다. 더욱이 본관만의 수평적인 이전이 아니라 분관의 이전과 연계된 까닭에 새로운 공간에 도서를 통합 배치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각종 도서관 비품의 제작과 설치, 반입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서로 얽혀 있었다. 도서관은 사전에 다음과 같은 단계별 작업 계획을 수립하였다.

- 1단계: 작업반 편성(지휘통제부, 행정반, 노력동원반, 자료공급반, 각종 조사반)
- 2단계: 장서점검 작업과 사후처리
- 3단계: 비품포장(정밀기계 및 비도서자료 등)
- 4단계: 자료배가(신도서관에의 구분배가에 따른 자료배가)
- 5단계: 도서포장
- 6단계: 상차운반 및 하차작업

7단계: 이전지 도시 위치까지 이송

8단계: 도서의 서가배열

9단계: 목록확인

10단계: 파손서적 및 문제운송에 대한 사후처리

본관은 각 분관에 10여 쪽에 달하는 「도서관 분관 이전 작업 요령」을 시달하고 이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 또 각 분관 장서의 효율적인 이전과 인수를 위해서 각 분관 장서 점검 시 본관 직원을 파견하였고, 작성된 관리 전환 대상 목록에 따라 책들을 각 상자에 포장할 때도 입회하도록 하였다. 포장 상자는 자료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8종류로 제작하고 각 분관에서 필요한 상자를 신청 받아 배정하였다. 각 분관의 포장 상자 숫자는 알 수 없으나, 본관의 경우 70만여 권의 책과 기타 자료들을 약 2만여 상자에 포장하였으니 물동량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할 수 있다. 1975학년도 1학기 개강을 앞두고 1월 20일부터 30일까지 도서관은 대학본부와 함께 1차로 이전하였다.

1975년 2월 28일 ‘서울대학교설치령’의 개정 공포에 따라 종래 ‘서울대학교 부속도서관’을 ‘서울대학교 도서관’으로 개칭하였으며, 분관을 본관에 통합하고 조직도 개편하였다. 1차 이전 기간 동안 미처 이전하지 못한 분관은 이후에 속속 이전 통합하였다. 동년 8월 약학도서관이 관악 캠퍼스로 이전하여 통합하였고, 10월에 치대도서관이 의학계 분관과 통합했으며, 1976년 2월 음악대학과 미술대학을 이전하면서 음악도서관과 미술도서관을 본관에 통합하였다. 마지막으로 1979년 12월 공학도서관이 관악 캠퍼스로 이전 통합하였다. 이로써 유기적 연관성이 부족하였던 분관 체제의 문제점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었다.



그림 1-2-8 1975년 1월 관악 캠퍼스로 이전하는 도서관. 도서관 본관에서 수송한 책과 자료만 2만여 상자에 달했다.

## 2) 종합화 이후의 도서관

서울대학교 도서관은 관악 캠퍼스로 이전하면서 수서과, 정리과, 열람과, 참고서지과 및 규장각도서관리실의 4과 1실 체제로 조직을 개편했으며, 분관은 농학분관과 의학분관만 인정하였다. 이



전 조직 체제와 차이라고 한다면 서무과를 없애는 대신 그 업무를 수서과가 관장한 점, 열람과에 속한 참고계를 참고서지과로 확대 개편한 점, 사서과 정리계와 수서계를 과 단위로 확장하고, 조사과 업무는 참고서지과에 통합한 점을 들 수 있다. 이후 10년 간 주요한 조직 변화를 연도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2-9 관악 캠퍼스 중앙도서관 전경

- 1976년 관장 직속의 자료선정위원회, 문헌복사위원회 설치, 이듬해 해체
- 1977년 각 분관에 운영위원회 설치
- 1978년 총장 직속의 규장각도서관위원회를 관장 직속으로 변경, 이듬해 환원
- 1983년 도서관장 직속의 법학분관 설치
- 1986년 정리과에 전산계 신설

이 시기 직원 수 변화를 보면, 1975년부터 1989년까지 총 직원은 109명에서 138명으로, 사서직은 44명에서 97명으로 늘었다. 15년 간 50만 권에 이르는 장서 증가와 두 배를 넘는 이용자 증가를 비롯하여 규모상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음을 감안할 때, 직원 증가는 사실상 도서관의 성장을 따라가지 못했다. 그러나 사서직 수는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상당수 임시 직원이 정식 직원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인데, 1975년 37명이던 임시 직원이 1989년에는 19명이 되었다. 이를 통해 총원 증가는 별로 없어도 사서직 수는 크게 증가할 수 있던 것이다. 그리고 사서직 처우 향상을 위한 박병호 관장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1988년 12월 31일 ‘공무원수당규정’이 대통령령 제12585호로 개정되었고, 우리나라의 국립 각 기관 전체 사서들이 1989년 1월부터 5급 이상 3만 원, 6급 이하 2만 원의 사서직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시설 및 장비도 여러 가지로 개선되었다. 1980년 6월 30일 카트리지 필름을 판독하고 복사할 수 있는 마이크로필름리더프린트 2대를 국제개발처(AID)에서 기증받아 자연 과학 계통의 정기 간행물 마이크로필름을 판독하고 복사할 수 있게 되었다. 또 1982년 8월 9일 본관에 도서 무단 유출 탐지기를 설치하였는데, 기본 도서실 출입구에

설치한 이 장비 덕에 도서 분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본교 학생을 가장한 가짜 학생이나 도둑까지 잡을 수 있었다. 그리고 1988년 9월 6일 4층 중앙출납대와 5층 서고를 연결하는 복리프트를 설치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운반하게 되었다.

도서관 서비스 시설은 1980년대부터 어느 정도 갖추어졌다. 1982년 3월 1일부터 야간 통행 금지가 해제되고 전일제 수업이 실시됨에 따라 일반 열람실 개관 시간을 1시간 연장하여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변경하였고, 교수들의 관외 대출 기간을 1976년 6월 1일부터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였다. 그리고 신형 복사기를 속속 들여오고, 대출 도서 예약제(1979년)와 장기 대출 제도(1979년), 타 도서관 자료 대리 복사 서비스(1980년) 등을 실시하였다. 1985년 6월부터 대출자 등록 업무를 전산 처리하였는데, 대출자 등록 파일에 대출과 관련된 필요 사항을 모두 입력함으로써, 매학기 등록 영수증을 제시하여 대출자 등록 확인을 받아야 했던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 처리의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밖에도 1982년부터 최신 학술 정보를 이용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국내의 각종 학술 단체, 연구 기관 등에서 주관하는 학술 세미나, 강연회, 심포지엄, 국제회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야별로 서지실에 비치하였다.

관악 캠퍼스로 이전한 후 도서관 이용자 수가 급격히 증가해서 도서관 건물 신축이 절실히 짐에 따라 법학분관과 규장각 건물을 신축하였다. 1982년 10월 8일에 착공하여 1983년 12월 3일에 문을 연 법학도서관은 5억 원을 기증한 김택수 동문의 도움으로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로 법학관 위쪽에 세웠다. 이 도서관(정식 명칭은 서울대학교 도서관 법학분관)은 김택수 동문의 아호를 따라 ‘국산(菊山)도서관’으로 불린다. 신축 도서관은 법률학 연구의 중추 기능을 하며 도서관 좌석을 독점하다시피 하던 고시 준비생들에게 따로 열람석을 제공함으로써 도서관 열람석 사정을 개선하는 데도 기여하였다. 한편 규장각은 1985년 10월 17일 착공하여 1989년 12월에 완공하였다. 5년 만에 완공한 규장각은 고서 보관과 관리를 위한 향온·향습 시설과 방화 시설 등의 현대식 시설과 기와 지붕의 고전적 면모를 함께 조화시킨 모습이었다. 규장각은 신축 이전하면서 본관에서 독립한 부속 지원 시설이 되었으며, 이로써 본관 열람석과 서고 상황도 다소 개선되었다.

1975년 이후 도서관 시설을 대폭 확충하였지만 예산은 이에 미치지 못하여 시설 확장에 따른 기능 변화가 부진하였다. 예산 문제는 도서관 설립 이후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매년 지적되었는데, 이는 캠퍼스를 이전한 후에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턱없이 모자란 도서 구입비는 단행본은 고사하고 구입해 오던 학술 잡지의 구입마저 어렵게 하였

다. 국립대학교로서 국가 지원이 절실하였지만 국가의 인식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그 부담을 학생들 납입금에 떠넘긴 형국이었다. 그리하여 설립된 지 30년이 지난 국내 최대의 대학 도서관 관장이 ‘책 구걸’을 하는 상황이 계속되었는데, 이만갑 관장은 『대학신문』을 통해 ‘미약한 현재의 도서비로는 도저히 필요한 많은 도서를 구비하기 힘들기 때문에 출판사나 저자, 교수 등은 신간 도서를 한 권이라도 꼭 기증하여 모든 대학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요청하였다.

그럼에도 꾸준한 장서 확충으로 1978년 3월 드디어 도서관 총 보유 장서가 100만 권을 넘어서는 성과를 낳았다. 그러나 장서 100만은 미국의 대학 도서관 100여 번째 규모에 불과한 수준으로 한국 최대 규모의 대학 도서관이 내놓고 자랑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그나마 장서의 많은 부분은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 및 각 단과대학 도서관에서 이관한 것이었고, 기증 도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짧은 역사와 술한 역경 속에서 이룬 소중한 성과이므로 그 의미를 과소평가할 수만은 없지만, 장서 100만 권 돌파 이후에도 여전히 장서는 예산 부족으로 미미하게 증가하였다.

소장 자료 정리 작업은 1966년 분관 제도의 신설 이후 분관에 대한 종합 정리 사업을 주를 이루었는데, 1979년에는 중앙도서관이 도서관 규정에 따라 종합 정리를 시행하라는 윤천주 총장의 특별 지시가 있었다. 당시 조사한 종합 정리 대상 도서 수는 약 6만여 권으로, 1차적으로 5명의 사서를 확보하여 미국학연구소 소장 자료부터 순차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정리한 연구소 소장 자료에 대한 카드는 카드 상단에 소장처 표시를 하여 본관의 열람용 카드와 함께 비치했다. 그런데 도서관 이용자들이 이를 보고 해당 연구소에 자료 대출을 요청하게 되어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였고, 본관은 종합 정리에 인력이 빠져나감에 따라 인력 부족 현상이 더욱 심해졌다. 이러한 문제를 다소라도 개선하고자 1984년 10월 26일부터 타 대학 학위논문을 간략 정리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정리과는 업무 개선의 일환으로 미국 게일로드(Gaylord) 사의 레이블 시스템(SELIN Labelling System)을 국내 최초로 도입하였다. 이전까지는 레이블을 손으로 일일이 써서 책에 붙여야 했다.

1986년은 도서 정리 업무가 획기적으로 변화한 해로 기록된다. 그 동안 도서 정리는 국내서나 외서를 막론하고 목록 표목을 로마자로 표기하는 단일 목록을 유지했는데, 국내서 격중과 외래어 표기법 개정에 따라 국내서 표목의 한글 표기 필요성이 커져 국내서 목록에 한하여 그 표목을 한글로 표기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1985년 12월 5일 류동렬 과장 등 30여 명의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해서 도서관 자료 관

리에 관한 규정과 서울대학교 도서정리규칙 중 국내서 정리에 관한 사항을 독립시켜 내규로 제정하고 1986년 1월 4일부터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1986년 이후 신규 수입된 국내 자료는 한글 표기 카드 목록으로 작성하고, 이용자의 효과적인 자료 검색을 위해 국내서 목록을 따로 편성하였으며, 국내서 1만 3천 권에 대한 열람용 목록 카드와 이미 로마자로 표기된 23만 4천 권 중 1만 5천 권에 대한 카드를 추가로 작성하였다.

한편 규장각 도서관리실은 1981년 7월 1일부터 1982년 6월 30일까지 특별 정리 사업의 일환으로 장서인 날인, 도서 원부 보완, 도서 점검 등을 실시하였다. ‘조선총독부지인(朝鮮總督府之印)’으로 날인된 규장각 도서 대부분에 ‘서울대학교도서’ 날인을 하여 서울대학교 소장임을 명확히 하였다. 그리고 오랫동안 실시하지 못한 장서 점검과 도서 원부 보완을 통하여 규장각 도서의 영구 보존 관리에 만전을 기했다. 이 사업은 2년 동안 14만 6천여 권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 3) 도서관과 학생생활

1975년 초 도서관이 동숭동의 비좁은 공간에서 벗어나 관악으로 이전했을 당시에는 새 도서관을 아주 쾌적하고 여유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새 건물은 비탈을 이용하여 지었기 때문에 구조상 정면에서 보면 6층으로 보이지만 측면에서 보면 사실 3개 층으로 되어 있어 1층에서 3층까지는 공간이 그리 넓지 않았다. 게다가 1층 양 옆의 대형 창고와 3층 북쪽의 일부 공간은 대학본부에서 사용하였고, 6층에는 박물관과 대학신문사가 입주하였다. 따라서 12개 분관을 한 곳에 종합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처음부터 그리 여유 있는 공간이 아니었다. 종합화 이후 2년이 지났는데도 예산이 부족해 기존 시설을 원활하게 이용하지 못했고, 관리 인원이 부족해서 전체 열람실조차 완전히 개방하지 못하는 사정이었다.

그러나 관악 캠퍼스에 세운 새 도서관은 종합캠퍼스 계획시에 총 학생 수 2만 명을 예상하여 건설했기 때문에 열람석 수는 서구 대학 수준과 비교해도 크게 뒤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1980년에 들어서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공과대학이 이전해 오고 졸업 정원제 실시로 열람실 환경은 더 악화되었다. 1980년에 도서관 이용자 수는 160여 만 명에 달했는데, 이는 전년도 이용자 수인 102만 명에 비해 무려 60% 이상 증가한 것이다. 당시 모습을 『대학신문』의 한 기사를 통해 살펴보자.

강의실에서, 도서관에서, 그리고 식당에서 심각한 과밀화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여기에서 서울대의 '출서기문화'도 형성된다. 도서관에 자리잡기란 하늘의 별따기였고, 때문에 새벽에 와서 자리를 선점한 학생들은 강의 시간에도 가방이나 책으로 도서관 책상을 확보해 두었다. 졸업 정원제 탈락이 최초로 적용되어 13명의 학생이 중도탈락한 1983년도에는 '요즘 너 안보여서 짚린 줄 알았어'가 보편화된 말이었음을 보면 그것이 학생들에게 끼친 심적, 육체적 고통이 얼마만한 것이었나를 알 수 있다. 캠퍼스에 꽉 들어찬 선배, 동료들 속에 섞여도 신입생들은 유대감보다는 경쟁의식과 고립감을 더 느꼈다. 도서관에 가 있지 않으면 항상 불안감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고, 벤치에 앉아 이야기하는 학생 중에 신입생은 찾아볼 수 없었다.

입학 정원의 증가로 기본적으로 이용자가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입학생의 3분의 1 정도가 졸업을 하지 못하는 제도에서, 학생들은 '도서관에 가 있지 않으면 항상 불안감이 떠나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위기를 느꼈고, 그만큼 도서관은 붐빌 수밖에 없었다. 이후 도서관에서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도서관 자리를 선점하려는 기이한 풍경이 벌어졌다.

비좁은 열람실 문제는 1979년에 접어들어 열람실을 확장하고 증설하면서 어느 정도 해결 기미를 보였다. 1979년 3월에는 4인용 테이블 위주로 된 102석 규모의 4층 대학원생열람실을 1인용 151석으로 바꾸었으며, 1980년 6월 구 목판서고에 476석을 추가로 확보하여 제5열람실로 개설하였다. 1981년 10월에는 4층 대학원생열람실을 5층으로 옮기면서 160석 좌석을 추가로 증설하였으며, 1982년 4월에는 제7열람실을 신설하였다. 또한 1983년에는 법학도서관 개관에 따라 기존의 법률자료실을 폐쇄하고 제8열람실을 개설하였으며, 1990년에는 규장각 신축 이전에 따라 자료열람실을 더욱 확충하고 새로이 박사과정열람실을 개설하였다.

1983년 9월 좌석 독점을 막고 부족한 열람석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4층 기본 도서실부터 지정좌석제를 실시하였고, 1984년 4월에는 제2열람실, 제3열람실, 음향도서실 등 총 1,078석으로 확대하였다. 그러나 지정좌석제는 좌석 독점 방지를 위해서는 최선의 대책이었지만 한 열람실에 적어도 직원 2인은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열람실에서 동시에 실시하기에는 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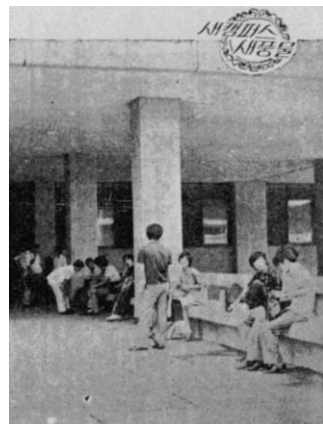


그림 1-2-10 1975년 8월 27일자 『대학신문』에 실린 도서관 중앙 통로 사진. 도서관 중앙 통로는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무더위를 피하며 쉴 수 있는 공간이었다.

한 인력보충이 선행되어야 했다. 결국 지정좌석제는 일부 열람실에서만 실시하다가 예산 문제로 그나마 중단하고 말았다. 도서관에서는 한때 순찰조를 편성하여 정기적으로 순찰하면서 책만 놓아두고 2시간 이상 자리를 비운 열람석은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스티커를 붙여 놓기도 했다. 총학생회도 공청회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좌석 독점 및 과다 점유 행위를 하지 않도록 협조를 유도하였다.

한편 도서관 주변은 학업에 지친 학생들에게 쉼터 역할을 하였다. 『대학신문』 1975년 8월 27일자 「새 캠퍼스 새 풍물」이란 기사는 다음과 같이 도서관 중앙 통로를 소개하였다. 관악 캠퍼스로 이전하고 나서 처음으로 여름 방학을 맞은 도서관 이용자들이 여름날의 무더위를 피해 시원한 도서관 중앙 통로에 모였던 것이다.

도서관 중앙 통로를 지나다 보면 벤치 위는 물론이고 난간과 계단 위에 걸터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는 많은 학생들을 볼 수 있다. 누군가 이 곳을 ‘동양에서 제일 시원한 곳’이라고 말했을 때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휴식을 취하는 학생들로 그야말로 만원사레. 하지만 학생들이 많이 앉아 있는 난간마다 ‘이 곳에 앉지 마시오’라는 팻말이 붙어 있음에 요주의. 어쨌든 벤치 위밖에 앉을 곳이 없는 학생들에게 시원한 바람과 더불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쉼터이다.

1970년대와 1980년대는 사회적 격동기였다. 1980년 이후 억압적 상황이 지속되자 학생들은 반정권 시위를 계속 벌였는데, 학내에 경찰이 상주하는 상황에서 시위를 벌이기란 결코 쉽지 않았다. 따라서 경찰이 접근하기 어려운 도서관을 시위장소로 자주 이용하였다. 관악 캠퍼스의 도서관 본관은 서울대학교의 중심에 위치할 뿐만 아니라, 흔히 집회 장소로 이용하는 ‘아크로폴리스’에 접해 있었다. 그러나 고층의 도서관 난간에서 시위를 주도한다는 것은 실로 위험한 일이었다. 1981년 경제학과 김태훈 학생이 투신자살 시위를 벌였고, 또 다른 학생이 시위를 주도하다가 사망하였다. 그러자 도서관에서는 창문에 쇠창살을 쳤다.

학생들은 이후에도 도서관을 종종 농성 장소로 이용하였고, 그만큼 도서관은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때가 많았다. 1985년 10월 31일부터 학생 1천여 명이 본관 철야 농성에 들어가 11월 4일까지 휴관한 바 있으며, 또 11월 초의 철야 농성으로 열람 의자 751개, 열람대 207개, 칸막이 254개가 파손되었다.

한편 1972년 6월 19일 서울대학교 도서관은 ‘불온간행물 일괄취급기관’으로 승인을 받아 본관 5층에 특수 자료실을 설치함으로써 비로소 특수 자료를 공식적으로 취급하

기 시작했다. 그때까지 제한되던 공산주의권 및 그와 관련한 학문 연구를 비로소 합법적이고 양성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1980년 1월 18일 사회과학연구소가 특수 자료 열람실을 설치하였는데, 한때 7,700여 권을 넘던 특수 자료는 1988년 소위 '7·7선언' 과 함께 특수 자료의 분류, 열람, 대출 등의 기준이 크게 완화되어 대거 일반 자료로 재분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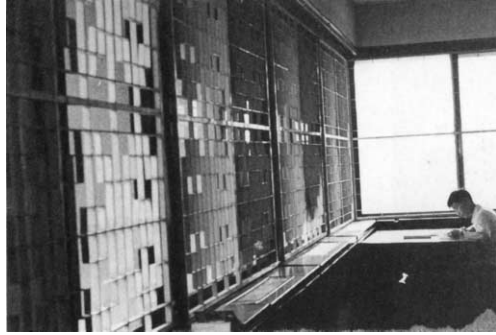


그림 1-2-11 1981년 경제학과 학생 김태훈의 투신자살 시위 이후 쇠창살을 친 도서관 창문

그런데 특수자료가 정부의 검열에 걸리지 않은 채 일반 자료로 분류된 경우도 드물게 있었다. 1981년 10월 13일 학생 운동을 하다가 구속된 학생이 도서관에서 『노동과 독점 자본(Labor and Monopoly Capital)』을 대출하여 복제 배포한 일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정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서관이 수사 대상이 되어 관계 기관에 연행 조사를 받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태는 결과적으로 도서 분류 업무를 기피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다수 책을 특수 자료로 분류하는 부작용을 낳아 이용자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했다. 이처럼 서울대학교 도서관은 격동기의 시련을 그 중심에서 겪지 않을 수 없었다.

### 제3절 지식 기반 사회와 도서관

#### 1) 도서관의 변모

1975년에 관악 캠퍼스로 종합화를 실현한 후 10여 년 이상 시간이 지나는 동안 여러 측면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 먼저 직제와 관련하여 1992년 3월 '서울대학교설치령'을 개정(대통령령 제13605호)함에 따라 그 당시까지 부속 시설로 있던 도서관을 대학 수준으로 격상하였고, 명칭도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으로 변경하였다. 아울러 중앙도서관의 하부 조직도 수서정리과, 도서관운용과, 의학도서관, 법학도서관으로 개칭 격상하였으며, 특히 분관장에 관한 규정을 설치령과 학칙에 신설하였다. 2001년 8월 31일

〈표 1-2-1〉 도서관 명칭과 조직의 변화

1961년	1965년	1975년	1992년	2001년 1월	2001년 8월
서울대학교 부속도서관	좌동	서울대학교 도서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좌동	좌동
서무과	서무과	수서과	수서정리과	수서정리과	수서정리과
사서과	사서과	정리과	도서운용과	정보관리과	정보관리과
열람과	열람과 조사과	열람과 참고서지과 규장각관리실	정보관리과 서무과	정보운용과	행정지원팀

〈표 1-2-2〉 도서관 시설 현황(2005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m<sup>2</sup>, 석)

구분	관별	본관	분관					계	
			사회과학	경영학	농학	법학	의학		치의학
연건평		30,505	2,704	1,168	2,427	1,247	4,294	768	43,113
열람석		3,889	387	415	322	294	566	127	6,000
건축 연도		1974	1995	1993	2004	1983	1974	2003	

에는 정보관리과와 정보운용과를 정보관리과로 통합하는 한편 행정지원팀을 신설하여 2과 1팀 6분관(경영학도서관, 농학도서관, 법학도서관, 사회과학도서관, 의학도서관, 치의학도서관) 체제로 조직을 정비하였으며, 2006년 들어 국제대학원에 국제학도서관 분관을 신설함에 따라 분관은 7개로 늘어났다. 2005년 12월 31일 현재 도서관 시설 현황은 〈표 1-2-2〉와 같다.

그동안 조직 개편 상황을 보면 1961년보다 현재의 조직 규모가 더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인원이나 장서의 규모, 서비스 대상자는 큰 폭으로 확대한 반면, 도서관 조직은 오히려 기회 있을 때마다 축소되었다.

한편 1992년 조직 개편과 함께 ‘국립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정원에관한규정’ 개정(대통령령 제13608호)에 따라 1994년에는 국립대학교 최초로 전문직을 사서과장에 보임하였다. 1985년에 ‘서울대학교설치령’ 개정으로 각 과 과장을 서기관 또는 사서서기관으로 보임할 수 있게 된 지 꼭 10년째 되는 해의 일이었다.

도서관의 공간 부족 현상은 이후 법학도서관, 경영학도서관, 사회과학도서관 및 규장각 등의 시설 확충을 통해 여러 노력을 기울였지만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분관이 전문 도서관으로서 설립하였던 본래 취지와 달리 해당 분야



자료를 제대로 이관해 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매년 약 10만 권 정도씩 증가하는 현재 장서 증가 추세로 볼 때, 이를 공간 수요로 환산하면 매년 약 400m<sup>2</sup>의 면적이 필요하고, 2010년에는 일반열람실(5,034m<sup>2</sup>, 3,369석) 전체를 서고 또는 자료실로 변환해야 한다.

공간 부족 문제를 일부나마 해결하기 위해 대학본부는 재무과 창고로 사용하는 중앙도서관 지하층 미개수 공간을 서고로 조성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만약 지하에 보존 서고를 조성한다면, 5층 단행본 서고 도서 75만 권의 약 30%를 따로 보존할 수 있는 공간이 되므로, 현재 자료실로 운용하는 단행본 서고의 주제별 자료실화와 자료실의 열람실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기초가 된다는 것이다. 이 방안은 2006년 1월 현재 대학본부에서 설계 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 다른 한편 대학본부를 이전하여, 중앙도서관은 자료 소장 및 이용자 연구 지원 등 고도의 학술 지원 연구 도서관으로 활용하고, 현 본부 건물은 학습 공간으로 이용하자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소장 자료의 경우, 지난 1960년대는 자료 구입비 부족으로 구입 도서보다 수증 도서가 훨씬 많았고, 1970~1980년대는 양자가 균형을 이루었다면, 1990년대 들어서는 도서 구입비 증가로 구입 도서가 수증 도서를 넘어서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계획에 따라 구입한 도서가 수증도서보다 도서관 장서 구성에 훨씬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고무적인 신호라고 하겠다. 또 최근의 특기할 만한 변화 양상은 종전의 소유 개념 구독에서 접속 위주 구독으로 새로운 개념의 구독 조건을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전자 자료의 이용률 또한 매년 증가하여 전자 자료의 구독 예산이 <표 1-2-3>과 같이 점차 증가하였다.

서울대학교의 경우 외국과 달리 기본적으로 인쇄 저널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보충하는 목적으로 전자 자료를 구독한다. 또 전자 자료의 구독 비용 대부분이 학술지와 같은 연속 간행물에 쓰여서, 학술지 비중은 전체 구입 자료의 80% 가까이에 이르는 데 비해 단행본 구입비는 현저히 감소하는 실정이다. 이것은 최신 학술지의 구독 중단

<표 1-2-3> 서울대학교 도서관 전자자료구독비와 총 자료구입비

(단위: 천 원, %)

구분	2000/2001년	2001/2002년	2002/2003년	2003/2004년
전자 자료 구독비	637,031	865,663	800,726	1,092,197
총 자료 구입비	5,032,950	5,190,040	4,529,542	5,156,172
전자 자료 구독 비율	12.65	16.67	17.67	21.18

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체 예산 중 학술지 구입비를 미리 배정한 후에 단행본 구입을 계획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교양 및 기초 학문 분야의 필수 도서와 연구용 전공 서적의 구입은 날로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도서관은 그 외형적 규모나 예산, 인적 자원 등 모든 면에서 국내 대학 도서관 중 최고를 자랑하는 도서관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우수한 외국 대학 도서관과 비교할 때 장서 규모나 예산 등이 뒤쳐지는 것이 사실이다. 미국이나 일본의 주요 대학은 차치하고라도 미국의 중위권 대학 도서관과 비교해도 거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으며, 이 차이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커지고 있다.

따라서 서울대학교 도서관은 최근 외국 도서관과 격차를 해소하고 적정한 자료를 구비하기 위해 ‘중장기10개년계획(2005~2014년)’을 수립했다. 이 계획은 목표 연도인 2014년까지 최소한 미국 ARL(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y)의 중상위권 대학 수준의 자료 구입을 목표로 하였다. 단계별 계획은 좀 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표 1-2-4>와 같이 2005~2007년, 2008~2010년, 2011~2014년 총 3단계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단행본 약 340만 권, 연속 간행물 총 13,500종, 데이터베이스는 135종 정도의 구독을 최종 목표로 하였다.

이와 같은 계획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간접 연구비를 장기적인 고정 수입원으로 확보하는 방안과 학위논문 및 학내 간행물의 원문 서비스나 학술지 이메일 서비스의 유료화 등을 통해 도서관 수익금을 활성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1990년대 이후 설치한 주요 문고를 살펴보면, 1994년 3월 24일과 9월 14일에 고인의 유지에 따라 유족들이 기증한 국어국문학과 이승녕 교수의 심악(心岳)문고와 국어국문학과 이희승 교수의 일석(一石)문고가 있다. 심악문고는 세종 때 간행한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를 비롯하여 『법화경 언해(法華經諺解)』, 『불설대보부모은중경

<표 1-2-4> 단계별 장서 확보 계획

(단위: 권, 종)

구분	단행본	연속 간행물	데이터베이스
2004년 12월 현재	2,448,000	9,600	58
1단계(2005~2007년)	2,704,500	11,600	85
2단계(2008~2010년)	2,996,000	12,700	110
3단계(2011~2014년)	3,426,000	13,500	135
확충목표	100여 만 권 증가	3,900종 증가	77종 증가

『佛說大報父母恩重經』 등의 고서를 포함, 총 1만 2천여 권에 이르며, 일석문고는 1481년 을해자본(乙亥字本)으로 간행한 『두시언해(杜詩諺解)』(제7권, 초간본), 1485년에 간행한 『불정심경다라니경 언해(佛頂心經多羅尼經諺解)』(원간본) 등의 귀중 도서를 포함, 총 6천여 권에 이른다. 이로써 서울대학교 도서관은 심약문고, 일석문고, 일사문고, 가람문고, 상백문고, 백사문고 등 국학 관계 주요 문고를 두루 갖추게 되었다. 2003년에는 도쿄도립대학 명예 교수인 오자와유사쿠(小澤有作)가 교육학 관련 도서 1만 5천여 권을 기증하여 오자와(小澤)문고를 마련하였다.



그림 1-2-12 1994년 3월 24일 심약문고 기증식

## 2) 전산화 사업의 추진

도서관 업무의 전산화 계획은 1970년대 이후 몇 차례 있었지만 대부분 원론적이고 추상적이며 현실성을 결여한 경우가 많았다. 뿐만 아니라 예산 지원이 따르지 않아 계획을 제대로 추진할 수도 없었다. 서울대학교는 이후 국제 수준의 대학원 중심 대학을 지향한 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와 함께 도서관 업무 전산화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정부 또한 1988년 12월에 ‘교육전산망사업계획’을 수립하였는데, 그 추진 내용이 서울대학교가 지향하는 바와 일치하였다는 점도 도서관 전산화에 도움을 주었다.

도서관 전산화 사업의 일환으로 수립한 ‘학술정보전산화계획’은 1990년 1월에 초안을 작성하여 다음 달 16일에 계획을 확정하였다. 이에 3월 20일에 열린 제4차 전산전문위원회에서는 학술정보전산화를 위한 전산 기기 및 소프트웨어 제안 요청서를 작성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동년 10월까지 약 8개월 간의 작업 끝에 개발 기종은 TANDEM, 소프트웨어는 자체 개발하는 것으로 하고, 제안 회사는 한국컴퓨터로 최종 결정하였다.

새로운 소프트웨어는 1993년 8월까지 개발하기로 하였고, 주 전산기는 1991년도에 도입하기로 계획하였다. 일의 추진 과정에서 주 전산기를 IBRD 차관 자금을 받아 도입하기로 계획을 수정하였는데, 차관 자금을 예정보다 늦은 1994년 10월에 받는 바람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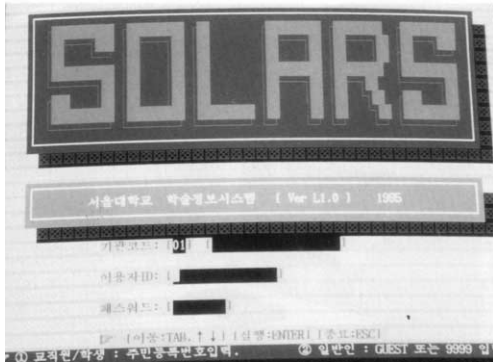


그림 1-2-13 도서관 업무 전산화를 위해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 SOLARS 초기 화면. 1995년에 가동을 시작하였다.

1991년부터 연차적으로 개발한 서브시스템을 시험해 볼 수 없었다.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가동 준비 작업은 주전산기를 설치하고 LAN 공사까지 마친 1994년 11월이 되어서야 가능하였다.

이후 시험을 통한 시스템 수정과 보안을 거쳐 자체 개발한 SOLARS 시스템의 가동식을 1995년 2월 21일 중앙도서관 4층 중앙홀에서 김종운 총장과 학내 인

사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했다. SOLARS(SOLARS, SeOul Library Association and Research System)는 개발 과정에서 ‘학술정보시스템’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다가, 명칭 공모를 통해 선정된 이름이었다. SOLARS는 클라이언트/서버 방식으로 개발하여 패키지로 대학 도서관에 보급하는, 국내 대학 도서관이 개발한 유일의 대학 도서관용 패키지였다. 1990년 개발 착수 당시 불모지에서 출발한 까닭에 개발의 어려움도 많았지만, 개발 과정에 많은 직원들이 참여하여 도서관 전산화에 대한 지식을 많이 축적할 수 있었다. 또한 개발 과정의 노하우를 공개하여 소프트웨어 하우스들이 상업용으로 도서관 전산화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도 공헌하였다.

그러나 시스템 가동식 이후 4년이 지난 시점에 발표된 『서울대학교 학술정보시스템 확충 방안 연구』(1999년)는 도서관 정보시스템인 SOLARS가 행정정보시스템과 정보광장(SIS) 등 학내 다른 정보시스템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축되어 정보시스템 간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확한 업무 분석도 이루어지지 않아 유사한 업무를 여러 부서가 수행하고, 데이터 중복도 많아 정확한 통계 파악이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내외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연계시켜 현재의 도서관 정보시스템을 통합학술정보시스템으로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2000년 6월 28일 두뇌한국21 정보 인프라 예산으로 7억을 배정받고, 2001년 3월 21일에 개발 업체인 (주)INEK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SOLARS 기능을 보완한 새로운 학술정보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인터넷 공모를 거쳐 새로운 학술정보시스템 명칭은 ‘SOLARS II’로 확정하였으며, 2002년 7월부터 시험 가동하고 시스템 안정화를 거쳐 같은 해 9월 14일에 정식으로 SOLARS II를 가동했다.

서울대학교 도서관은 SOLARS II를 완성함으로써 이용자 위주의 서비스를 확고히 하는 동시에 전자 저널,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등 웹 기반 자원과 기술을 적극 수용하고, 교내의 중요 소장 자료를 디지털화함으로써 전자도서관으로의 변모를 꾀하였다. 일찍이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전자도서관의 설계에 관한 연구』(1996년)는 도서관은 이제 더 이상 책자 자료만의 소장 기관이 아니라 정보를 가진 모든 형태의 자료를 수용할 수 있는 기관이어야 하며, 이용자는 더 이상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필요한 정보를 어느 곳에서나 구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전자도서관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었다.

전자도서관 시스템 개발을 위해 2002년 2월 학술정보원으로부터 예산을 배정받아 동년 5월 7일 TG Infonet과 2002년 5월부터 2003년 1월까지 총 6억여 원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2003년 1월 한 달 동안 시스템 테스트를 거쳐, 같은 해 5월 21일 총장을 비롯한 학내외 여러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스템 가동식을 가졌고, 전자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행하였다.

전자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소개한 전자도서관 시스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학술정보 서비스 강화

- ① 이용자 중심 인터페이스 강화
- ② 개인화된 웹페이지를 이용한 맞춤형 전자도서관 구현
- ③ SDI 서비스 및 e-mail 서비스
- ④ 교수, 연구자 그룹을 위한 개인학술연구물 공유시스템 구축운영

### 2. 선진기술의 도입

- ① 국내 최초로 프락시서버를 통해 교외에서 전자저널 및 웹 DB검색을 할 수 있는 인 증방식변환서버의 도입
- ② 콘텐츠의 데이터변조, 복제방지를 위한 워터마킹 저작보호기술 적용
- ③ 이용대상 및 이용범위 제한을 통한 콘텐츠 보호를 위한 DRM의 적용
- ④ 고해상도를 유지하면서 네트워크 부하를 해결할 수 있는 데자뷰의 도입
- ⑤ 학생이 제출한 텍스트화일의 학위논문을 자동으로 PDF의 원문으로 변환시켜주는 학위논문업로드 시스템의 개발

### 3. 디지털 콘텐츠 강화

- ①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 제공
- ② 교내에서 발행한 단행본, 연간물, 학위논문 등의 대학간행물
- ③ 귀중본, 창간호잡지, 탁본 등의 고문헌자료실 소장자료
- ④ 대학기록관, 한국교육사고, 신문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록자료

⑤ 의학관련 슬라이드자료, 음악 및 미술작품 등 각 단과대학이 보유한 강의자료

⑥ 원문자료 이외에 비디오, 오디오, E-book 등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 제공

#### 4. 통합검색 서비스 제공

① 기존의 도서관소장자료와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콘텐츠와의 통합 검색제공

②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에 대한 통합검색을 위한 유형별 메타데이터 개발 및 적용

③ 종합학술정보시스템 및 학내 정보시스템의 데이터에 대한 통합검색 서비스

전자도서관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많이 안고 있다. 전자도서관은 오프라인 도서관보다 훨씬 복잡한 저작권 문제와 연관돼 있어서 외부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므로 서울대학교 전자도서관의 문제들도 내부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쉽지 않다. 또한 전자 자료는 인쇄 자료와 달리 전자 자료를 공급하는 출판사와의 계약(1년 계약이 일반적)이 끝나면 자료를 더 이상 소장할 수 없으며, 계약이 만료되면 계약 기간 동안 열람하던 자료를 볼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또 정보 매체의 종류가 달라지는 경우, 일일이 전자 자료의 저장 형태를 바꾸지 않으면 자료를 계속 제공할 수 없다. 출판사에서 서울대학교 소장 자료 이외 외부 열람을 제한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으며, SOLARS를 사용하지 않는 다른 기관들과 교류할 때 발생하는 장애로 인해 서버를 표준화하는 것도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 3) 지식 공유의 장으로

‘대학의 심장’이라 불리며 학문 연구를 위한 지식의 원천 구실을 하는 도서관은 지식 정보화 시대라 불리는 요즘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2000년대 들어 서울대학교에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도서관의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논쟁을 벌인 일은 주목할 만하다. 도서관 공간 부족에 대한 지적은 그 이전부터 되풀이되었지만, 이때의 논쟁은 단순히 공간 부족 문제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도서관 공간의 사용 주체가 누구인가, 국립대학교인 서울대학교의 공공성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와 같은 문제들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2003년 9월 22일자 『대학신문』은 ‘도서관 열람실 개방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제

목으로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을 실었다. 열람실 개방을 반대하는 학생은 서울대학교가 국립대로서 국민 세금을 어느 정도 지원받고 있다 하더라도 도서관을 비롯한 학내 시설을 지역 주민을 위해 건립한 것이라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학내 자원 이용의 우선권을 재학생에게 부여해야 하며, 열람실을 지역 사회에 개방한다 해도 지역 주민들보다는 고시생들이 자리를 차지하게 될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반면 열람실 개방에 찬성 입장의 한 학생은 타대생의 도서관 이용 때문에 서울대생들이 어느 정도 불편을 겪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서울대는 많은 재원을 세금으로 충당하는 만큼 사회에 이바지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용자를 제한하기 전에 도서관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이용자들의 자율적인 규제가 있어야 하며, 근본적으로는 기성회 예산 등을 통제해 제2 도서관을 건립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당시 대학 도서관의 공공성을 둘러싼 논쟁은 비단 서울대학교에서만 벌어진 것이 아니었다. 서울 소재 일부 대학에서는 학내 자치 단체를 중심으로 교육의 공공성 차원에서 도서관 개방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위의 찬반 논란이 보여 주듯 재학생의 학습권에 근거한 반대 입장도 만만치 않아 어느 대학이든 쉬운 결론을 보지 못하였다.

서울대학교의 경우 1999학년 2학기부터 도서관 열람실 및 서고를 제한적으로 개방하였다. 일반 자료실은 신분증만 있으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게 했으며, 열람실의 경우 고등학생 이하를 제외하고 주민들과 졸업생들에게 전면 개방했다. 그러나 열람실 공간이 매우 부족해지자 학교 측에서는 곧 열람실 입구에 바코드 인식기를 재설치하고, 이용을 원하는 졸업생들에게 예치금 4만 원을 받는 등 열람실 개방을 다소 제한하고자 했다. 이에 졸업생들이 도서관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이 이어지자 2001년 1학기부터 다시 열람실을 개방하였다.

『대학신문』이 2003년 11월에 서울대학교 재학생 26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68.2%가 ‘도서관 열람실의 일반인 개방이 타당하다’, 30.7%가 ‘열람실의 일반인 개방이 부당하다’고 대답하였다. 개방을 찬성하는 이유로는 ‘교육의 공공성’이 39.6%, ‘서울대는 국민의 세금을 지원받는 국립대이므로’가 32.4%를 차지하였으며, 열람실 개방 범위에 대해서는 ‘전면 개방’이



그림 1-2-14 도서관의 일반인 개방 문제를 다룬 『대학신문』 만평

31.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팽팽했던 찬반 논란과 달리 열람실 개방에 대한 지지 비율이 월등히 높은 점은 열람실 이용 빈도에 대해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와 ‘1주일에 1~2번 이용한다’가 각각 39.0%와 38.2%의 높은 비율을 차지했음을 보면 그 이유를 대략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학생들 대부분은 또한 열람실 공간 부족 문제를 심각하다고 보았으며, 학생들의 비양심적 행위와 고시생의 좌석 점유가 문제의 심각성에 일조하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이로부터 1년 후 도서관의 공간 부족 문제는 다시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이때의 논의는 열람실의 개방 여부를 따지는 데 국한하지 않고, 도서관의 신축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조직적인 운동도 나타났으며, 총학생회와 중앙도서관 주최로 도서관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까지 개최했다.

2004년 10월 14일과 15일 양일에 걸쳐 개최된 토론회는 도서관자치위원회, 제2도서관건립추진본부 같은 학내 자치단체와 유정희 관악구 의원, 학내 정보 인권 운동 모임인 ‘뒷통수’, 대학 도서관 개방 운동을 벌이고 있는 학외 단체 ‘올리브’가 참가하였다. 토론회는 이틀 간 열띤 토론을 벌인 끝에 좌석 독점 방지를 위한 옐로·레드 카드제의 확대 실시, 자료실과 열람실의 장기적인 통합, 단과대학 강의실 활용을 통한 열람실 부족 문제 해결, 일반인의 자료실 도서 대출 허용 등을 실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의 관심사였던 외부인에 대한 개방 문제가 끝내 합의를 보지 못해 총학생회는 총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중앙도서관 학습실 외부인 개방·제한에 대한 총 투표’를 2004년 11월 23일부터 4일 간 학부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그러나 유효 투표율인 50%를 넘기지 못해 총 투표는 무산되고 말았다.

2006년 현재 중앙도서관 제3열람실을 일반인에게 공식적으로 개방하고 있으며, 이외의 열람실도 출입 확인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개방’과 다름없는 상태다. 자료실의

경우 제한적으로 외부인이 이용하고 있다. 외부인은 자료실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신분 확인하면 출입이 가능하고, 장서를 열람할 수는 있지만 대출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르면 내년부터 졸업생과 지역 주민도 서울대학교 도서관 자료를 대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렇지만 외부 대출 서비스 실시 이후에도 서



그림 1-2-15 2004년 10월 14~15일 도서관 문제 해결 방안을 위해 열린 토론회



울대학교 구성원의 도서관 이용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초기에는 정원을 정해서 회원제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한다.

인도의 저명한 도서관학자 링가나단은 도서관의 책은 이용하기 위한 것이고,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며, 도서관은 책에 맞는 독자를 찾는 동시에, 독자가 책을 찾는 시간을 덜어 주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도서관은 이용자를 중심으로 운영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미래의 도서관은 이용자들이 도서관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이며, 도서관은 정보를 구하는 이용자를 정보를 가진 연구자나 문헌에 연결시켜 주는 진정한 의미의 중개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전자 문서들이 더욱 증가하는 한편 이용자들 또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이용을 선호함에 따라, 이용자들은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필요한 정보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면 도서관은 벽이 없는 '지식 공유의 장'을 넘어 인터넷상의 가상 공간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에 대응하여 서울대학교 도서관은 새 시대가 요구하는 도서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착시키는 한편, 대학 도서관의 중추로서 그 동안의 기능과 역할을 변함없이 다하여 국제적으로도 손색없는 대학 도서관으로 도약해야 할 것이다.



### 제 1 절 정보화의 추진

#### 1) 정보화의 도정

21세기 지식 기반 사회를 선도할 세계 일류 대학을 지향하는 서울대학교는 정보화를 통해 세계 최고 대학 수준의 교육, 연구, 사회봉사 행정 서비스 제공을 실천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실천하고자 서울대학교는 ‘언제 어디서나 높은 품질의 교육 제공’, ‘새로운 지식의 창조를 돕는 정보화’, ‘쉽고 빠르고 편리한 행정 서비스 구현’, ‘대학의 사회봉사 지원’, ‘한국학 정보, 생명 과학 정보,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세계 중심 대학으로 육성’, ‘예비 학생, 동문, 학부모와 같이 가는 대학’, ‘국제화된 대학’, ‘정보화된 대학’을 세부 목표 과제로 선정하여 대학의 모든 영역에서 전례 없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실천 과제는 상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정보화 부문의 질적 향상과 양적 확대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추어 서울대학교의 정보화 또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서울대학교의 정보화는 1970년 5월 28일에 공릉동 공과대학 캠퍼스에서



그림 1-3-1 1980년대 초 컴퓨터 터미널실

IBM1130(64KB)을 도입하여 전산 업무를 시작한 것이 그 시초이다. 이후 1970년대의 정보화는 주로 컴퓨터 언어 중심의 전산 교육과 실습, 교수와 대학원생의 연구 지원을 위한 통계 데이터 처리, 성적 처리와 급여 중심의 행정 업무 전산화에서 이루어졌다. 본격적인 정보화는 도서관의 전산화와 더불어 1975년

관악 캠퍼스로의 이전과 함께 첫 정보화 추진 조직으로 전자계산소를 설립하면서 시작되었다. 전자계산소의 설립 이래 정보화는 줄곧 전자계산소와 역사를 같이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1986년 9월 전자계산소가 연면적 2천 평 규모의 단독 건물로 이전하면서 정보화 추진을 위한 독립적인 발전 토대를 구축하였다. 이어 주 전산기를 도입하고 서울대학교와 도쿄대학교를 연결하여 국제학술전산망(BITNET)에 가입함으로써 본격적인 전산 지원 시설의 모양새를 갖추었으며, 전자계산소 규정을 개정하여 기획부, 연구부, 교육전산망부, 교육지원부, 정보관리부 및 행정실을 두었다. 1989년 10월에는 서울대학교설치령 개정(대통령령 제12831호)에 따라 '전자계산소'를 '중앙교육연구전산원'으로 개칭하여 더 적극적으로 정보화를 추진하고자 하였다.

1990년대에는 사회 전반의 정보화 추세에 힘입어 서울대학교의 정보화도 눈부신 발전을 기록하였다. 1990년대 초에 접어들면서 컴퓨터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으로 캠퍼스 전산망을 구축하기 시작하였고, 1992년에는 교육부와 협력하여 국내 대학들을 하나의 전산망으로 연결하는 교육 전산망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내 대학에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교육 전산망 서비스와 함께 1991년에 처음 개통한 인터넷은 발전과 증속을 거듭하여 국내외 접속 용량이 650Mbps까지 달하기도 하였다. 통신 수요가 폭증하자 효과적인 비용으로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2000년에 전문 통신 사업자에게 아웃소싱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후 정보 통신



그림 1-3-2 1990년 8월 23일 서울대학교 근거리 전산망 개통

## 〈표 1-3-1〉 서울대학교 정보화 추진 경과

## 1970년대(태동기)

공과대학 컴퓨터 도입 - IBM1130(64KB)  
전자계산소 설립 - 서울대학교설치령 개정

## 1980년대(기반 형성)

전자계산소 단독 건물로 이전 - 연면적 2천 평  
주 전산기 강화 - IBM3090 도입  
국제학술전산망(BITNET) 가입 - 일본 9.6Kbps  
전자계산소를 중앙교육연구전산원으로 개칭

## 1990년대(발전: 양적 팽창)

캠퍼스 전산망 구축 - FDDI(100Mbps), ATM(622Mbps)  
교육 전산망 구축 - 서울대학교 및 지방 국립대학교 9곳  
용도별 전산기 도입 - MV40000, Cyber962, AlliantFX 등  
국산 주 전산기 도입 및 시범 운영 - TICOM 1·2호기  
정보광장(SIS) 구축 및 운영  
· 1단계: 단순 종합 정보 시스템  
· 2단계: 종합 행정 정보 시스템으로 강화  
학술 연구용 주 전산기 교체 - IBM SP2, IBM RS/6000 등  
서울대학교 홈페이지 서비스 개시(한·영) - <http://www.snu.ac.kr>  
교육 전산망 인터넷 서비스 및 BITNET 종료(해외: 90Mbps, 국내 백본: 45Mbps)  
정보화본부 발족(전 학술정보원) - 서울대학교 학칙 개정

## 2000년대(발전: 질적 개선)

캠퍼스 전산망 관리 시스템(NMS) 및 자원 관리 시스템(RMS) 개발  
학술 연구용 주 전산기 확충 - 아시아 아카데미 최고 수준의 슈퍼컴퓨터 도입(5TFLOPS)  
무선 랜 구축  
통합 보안 시스템 구축  
· 1단계: 보안관제실 구축 및 인터넷 관문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 구축  
· 2단계: 주요 서버팜 보안 강화 및 바이러스 방역 관리 시스템 구축  
포털사이트 구축 - 정보화포털 구축 및 확충  
대표 홈페이지 재구축 - 국문 대표 홈페이지 재구축 및 영문 대표 홈페이지 개선  
기가비트 초고속 캠퍼스 전산망 구축 - 백본 전송속도: 10Gbps  
통합 행정 정보 시스템 웹 부문 재구축 - J2EE를 이용한 웹 기반 재구축  
리눅스허브센터 구축

기술의 비약적인 발달로 인터넷 이용이 활성화되었으며, 이는 곧 모든 정보 기반 업무 영역을 웹 기반 환경으로 바꾸었다. 그리하여 교내 행정 및 정보 처리를 통합 처리 지원하는 정보광장과 서울대학교 인터넷 홈페이지가 등장하였다.

1999년 정부가 두뇌한국21(BK21)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대학원 전용시설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BK21 정보 인프라 구축 사업은 서울대학교의 정보화 기반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3단계로 나누고 연차별 투자 계획(총 398억 원)을 수립하여 초고속 캠퍼스 전산망 구축, 전자도서관 구축, 종합학술정보시스템구축, 정보검색실 확충, 학술 연구용 주 컴퓨터 도입 등 5개 분야에서 정보 인프라를 개선하고 확충하였다.

1970년대 정보화 조직은 대학본부의 전자계산소, 공과대학 전산실, 농과대학 전산실이 고작이었다. 1980년대 초에는 도서관 업무의 전산화와 더불어 도서관에서는 전산실(또는 DB반)을 설치하였으며, 1990년대 들어서면서 각 단과대학(원)과 연구소에서 각각의 필요에 따라 전산실 및 자료실을 설치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하였다. 그 후 대학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정보화 사업의 필요성이 커져 1999년 11월에는 정보화와 관련된 학내 조직들을 통합하여 정보화에 필요한 예산, 인력, 사업 등을 통괄하는 학술정보원을 발족하였다. 학술정보원은 명칭과 조직을 몇 차례 변경한 후 현재의 정보화본부로 이어졌다.

정보화본부는 산하에 정보화기획팀과 중앙전산원을 두었다. 정보화기획팀은 정보화를 위한 종합적인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정보화 사업과 예산을 총괄 조정하며, 캠퍼스 전산망 관리를 지원하고, 정보 자원 관리 및 학술 정보와 관련하여 본부장을 보좌하도록 하였다. 한편 중앙전산원은 산하에 교육연구지원부, 정보관리부, 전산망부, 사용자지원부, 정보화지원실을 두어 학내의 정보화 인프라를 구축하는 동시에 서울대학교 정보화본부규정 제3조 2항에 따라 교육·학술·연구의 정보화를 관장하도록 하였다. 학술 정보화의 경우 중앙도서관을 비롯하여 규장각, 박물관 및 여러 전문연구정보센터에서 해당 정보화 사업을 시행 중이며, 교육 정보화는 교수학습개발센터(CTL)에서 해당 정보화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정보화 관련 학내의 최고 심의 기관은 '서울대학교 정보화위원회'이다. 이 위원회는 대학 정보화를 위한 종합적인 기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기관별 장단기 정보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정보화 사업 및 예산 조정에 관한 사항, 기타 정보화 사업의 기획과 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기초교육원

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연구처장, 기획실장, 사무국장, 시설관리국장, 정보화본부장, 중앙도서관장, 중앙전산원장, 교수학습개발센터 소장 등의 당연직 위원과 총장이 임명하는 8인 이내의 전임 교원으로 구성한다. 2004년에는 정보화 사업의 총괄적인 기획과 조정을 위해 학칙과 규정을 개정하여 정보화본부장(CIO)에게 정보화 전체 예산에 대한 실질적인 조정권을 부여하고 정보화위원회가 이를 검토하도록 하였다. 이 밖에도 일부 대학(원)과 부서에서 전산실 또는 정보 센터를 두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정보검색실·전산실습실을 관리하고 학생들의 교육 실습과 교수들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진용을 갖추게 되기까지 서울대학교 정보화의 역사는 이미 짧지 않은 시간을 거쳤다. 지속적인 정보화 사업의 결과,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가상 공간들을 창출하였으며, 이 공간은 또한 캠퍼스 구성원의 삶의 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변화는 지식 기반 사회를 맞이하여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대학 각 부문에서 진행되는 정보화 현황을 검토하는 일은 서울대학교의 공간 변화를 전망하기에 좋은 방법일 것이다.

## 2) 정보 기반의 구축

대학의 정보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용자들이 손쉽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기초 환경 조성이 우선해야 한다. 정보 이용을 위한 기초 환경으로 첫째 충분한 컴퓨터 처리 용량, 둘째 넉넉한 데이터 전송 용량, 셋째 언제 어디서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접속의 용이성, 넷째 처리·전송 중인 데이터의 신뢰 보장, 다섯째 전체 정보화 시스템의 안정성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사용자의 기초적인 정보 이용 요구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때 새로운 연구를 계속할 수 있고 정보화의 발전을 위한 끊임없는 시도와 노력이 비로소 결실을 맺을 수 있다. 그러므로 정보화를 이루는 데에 정보 기반은 마치 집을 지을 때 기초 공사와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근간을 이루는 부분이다. 정보 기반이 부실하면 아무리 많은 예산과 노력을 투자하여도 대학의 정보화를 성공적으로 완성하고 운용할 수 없다.

서울대학교에서는 학술 연구용 주 컴퓨터의 용량을 충분히 확보하고자 슈퍼컴퓨터를 도입하여 학내 및 타 대학 연구진들에게 제공하고 고속 캠퍼스 전산망의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또 이용자들에게 편리하고 용이한 정보 접속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캠퍼스 곳

곳에 열린 정보 검색실을 설치하고, 장소에 제약받지 않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무선 캠퍼스 전산망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안전한 데이터 관리를 위한 보안 강화와 전체 정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등을 정보 기반의 중점 분야로 정하고 예산과 노력을 집중 투자하고 있다.

### (1) 슈퍼컴퓨터의 도입과 활용

과학 기술 분야에서 대학의 연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차세대 고성능 컴퓨팅 발전전략을 검토하여 주어진 환경에 가장 적합한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학술 연구 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정보 사용량과 집중도가 높은 대학에서 슈퍼컴퓨터는 1차적인 연구 목적 이외에도 정보 기반 시설로서 필수라 할 수 있다. 기존에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 대학의 슈퍼컴퓨터 수요를 공급하며 국가의 슈퍼컴퓨터 센터 역할을 해 왔지만, 전국의 연구소와 산업체, 대학 등이 공동으로 이용하다 보니 충분한 성능을 발휘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서울대학교는 1995년 10월에 도입한 IBM SP2 시스템의 계산 능력이 도입 3년 이후부터 이용자의 수요에 절대적으로 미치지 못해 적극적인 연구 활동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IBM SP2 시스템은 본래 1999년 9월에 임차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대체 시스템 도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무상 임대 형태로 그 이후에도 계속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1999년 11월 BK21 사업을 시작하면서 서울대학교 연구 기반 시설로 학술 연구용 주 컴퓨터의 도입을 확정하였고, 이에 따라 2000년 5월부터 슈퍼컴퓨터 2호기(IBM RS/6000 SP)를 도입하여 활용하였다. 5개월 간의 시험 운영 후 2001년 4월부터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전국 대학에 유료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연구 여건의 개선과 함께 슈퍼컴퓨터 2호기를 활용한 연구 성과도 다수 나오게 되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슈퍼컴퓨터 2호기도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와 컴퓨팅 파워의 부족으로 대형 연구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서비스의 한계에 도달하였다. 이로 인해 2004년 12월에는 슈퍼컴퓨터 3호기를 새로 도입하였는데, 이를 통해 선진적인 연구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연구 능력이나 산업 부문과의 연계를 향상하였다.

슈퍼컴퓨터 3호기는 실측 성능치 5.6183TFlop/s의 자원으로 그 성능은 슈퍼컴퓨터 2호기의 30배에 달한다. 슈퍼컴퓨터는 2005년 6월에 가동식을 갖고 동년 8월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최고 사용률이 76%를 기록한 바 있으며, 2006년에도 평균 42% 이상의 사용률을 유지하고 있다. 2006년 하반기에는 슈퍼컴퓨터 사용

자를 위해 리눅스 사용법과 상용 프로그램 등에 대한 기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슈퍼컴퓨터 포털사이트를 구축하여 웹 기반 플랫폼에서 고성능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전문 교육 실시를 위한 고성능 컴퓨팅 e-Learning 콘텐츠도 준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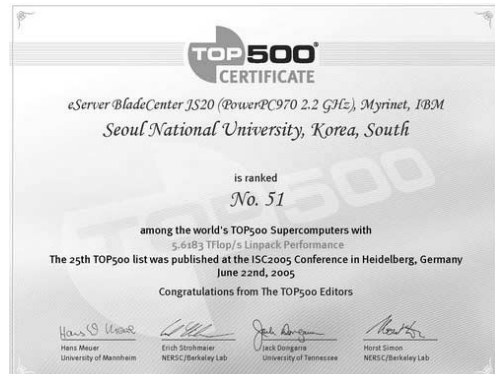


그림 1-3-3 2005년 6월, 서울대학교 슈퍼컴퓨터 3호기가 51위임을 증명하는 인증서

## (2) 캠퍼스 전산망의 구축

캠퍼스 백본망(Backbone Network)은 인터넷을 통한 국내외 학술 활동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교내의 인터넷 정보를 원활히 교류하고, 빠른 시간 내에 사용자가 요구하는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서울대학교는 1989년에 최초로 백본망을 FDDI망으로 구축하였고, 1997년을 기해 ATM(Asynchronous Transfer Mode)망으로 전환하였다.

사용자의 급증과 인터넷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에 따라 2000년에 캠퍼스망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였고, 2000년 말에 백본망 광케이블 교체를 시작하여, 2002년 8월에는 기가비트 백본망 구축을 완료하였다. 기가비트 백본망은 서비스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해 백본의 어느 한 링크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경로를 통해서 서비스할 수 있는 물리적 네트워크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백본 장치 자체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도 다른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해당 백본 장비가 구성하는 네트워크에서만 영향을 미치도록 코어 백본망(10Gbps)과 권역 백본망(2Gbps), 건물 백본망(1Gbps)으로 연결되는 3계층 트리 형식의 백본 구성을 세계 수준으로 구현하였다. 이로써 멀티미디어 자료 전송과 화상 회의 등 높은 대역 폭을 요구하는 일들도 충분히 실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백본망을 구축했지만 실제로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건물 내 통신 선로들은 여전히 노후하거나 불량하여 시급한 개선이 필요했다. 따라서 2002년에서 2004년까지 3개년에 걸쳐 56개 건물의 통신 선로를 교체하였으며, 총 1만여 개의 포트도 개선하였다.

캠퍼스 전산망의 인터넷 연동은 3개 캠퍼스가 모두 관악 캠퍼스를 통해 외부 인터넷을 이용하도록 구현하였으며, 외부 인터넷 연결은 단일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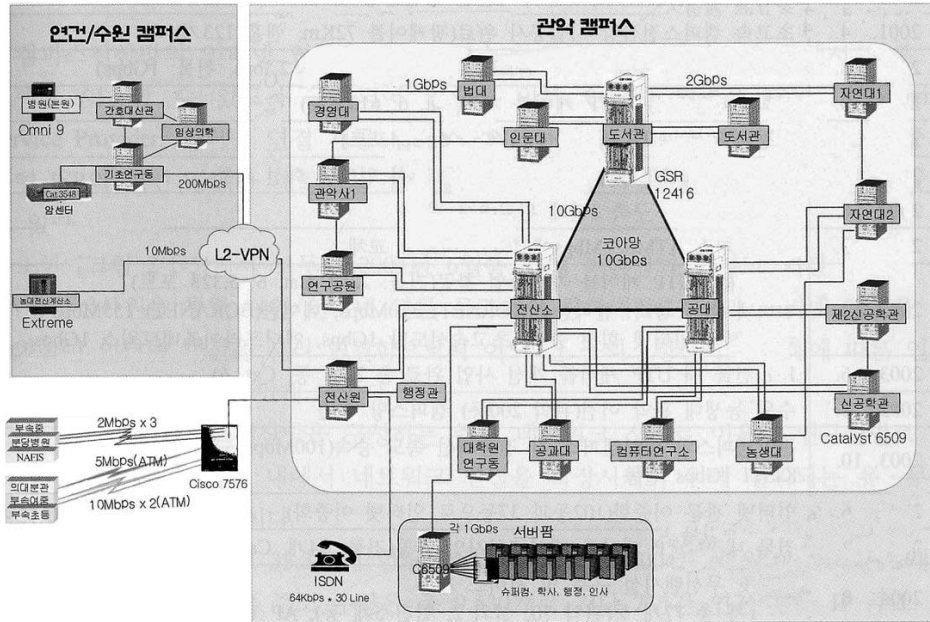


그림 1-3-4 서울대학교 네트워크 구성도

인터넷 연결 제공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여러 ISP로 연결을 다중화하여 ISP의 회선 장애나 네트워크 장애에 대비한 인터넷 경로의 백업 체제를 갖추었다. 또한 인터넷 관문을 중앙전산원(102동)뿐만 아니라 공과대학(37동)에도 추가 설치하여 중앙전산원의 정전이나 인터넷 장애에도 대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인터넷 회선을 안정화하였다. 2004년 12월 현재 학내 네트워크에 연결된 단자(Port) 수는 18,934개이고, IP는 42,860개이다.

한편 노트북이나 PDA 등과 같이 정보화 기기가 소형화되고 이동성 지원을 요구하는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점차 무선 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서울대학교에서는 무선 접속 장치를 학내 곳곳에 설치하여 2000년 12월부터 학내에서 자체 무선 랜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2005년 12월부터는 기존의 노후 장비를 교체하거나 신규로 확충하여 관악 캠퍼스 31개동과 연건 캠퍼스 8개동으로 이용 지역을 확대하였다. 아울러 무선 랜 활용도를 높이고자 중앙전산원에서 노트북과 무선 랜 카드를 대여하고 있다.

### (3) u-campus의 기반 조성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유비쿼터스란 사용자가 컴퓨터나 네트워크를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새로운 정보 통신 환경을 의미한다. 이러한 유비쿼터스의 구현은 모든 자료의 정보화, 컴

퓨터의 소형화, 네트워크의 무선화 등을 전제로 한다. 2004년 2월 서울대학교는 학내에서 유비쿼터스를 구현할 수 있는 u-campus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KT와 산학 협력 프로그램 협정을 맺고 이동 통신망을 확충하였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2004년 8월에는 학내 유인 지역의 2분의 1에 달하는 77개동에 네스팟 무선 랜 시설의 구축을 완료하였

다. 그러나 이후 네스팟 유료 서비스 이용자는 2004년 11월에 가입한 3천 명 이외에 새로 추가된 바가 거의 없었다. 이에 정보화본부는 학내 네스팟 유휴 시설을 적극 활용하고자 2006년 5월 12일부터 2007년 2월까지 전국 어디에서나 네스팟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ID 1000개를 임대하여 제공키로 하였다. 또한 2005년 11월에는 학내 일정 지역에서 음성 통화와 문자 전송 서비스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D-Zone’ 시설을 구축하여 2006년 3월부터 본격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PDA나 휴대폰을 통해 학사 행정 및 도서관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콘텐츠를 구축하여 시범 운영하고 있다.

#### (4) 정보검색실의 확충

서울대학교는 캠퍼스 어느 곳에서나 5분 이내 거리에서 PC와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정보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1999년 이래 정보검색실 확충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현재 학내의 중앙전산원, 중앙도서관, 단과대학 등에 설치한 50여 개의 정보검색실과 전산실습실을 통해 편리하게 문서를 작성·출력하고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에는 중앙전산원 1층에 24시간 개방하는 정보검색실(I. Space)을 마련하였다. 이곳에는 고성능 PC 40대, 흑백 프린터 3대,



그림 1-3-5 학생회관 내 모바일 서비스 센터



그림 1-3-6 24시간 정보 검색이 가능한 I. Space 내부

컬러 프린터 1대, 고속 스캐너 2대와 영상물 상영이 가능한 전동 스크린 등을 설치하였으며, 장애인 학생을 위한 특수 기기와 시설도 마련하였다. 한편 중앙전산원과 연건 분원에는 영상 회의 시스템, 편집 보드, 디지털카메라와 같은 멀티미디어 자원을 보급하여 단순 PC 활용에서 벗어나 다양한 기능과 성능을 갖춘 멀티미디어 환경 조성에도 역점을 두었다.

#### (5) 서버 운영 및 백업 시스템

서울대학교 도메인 서버에 등록하여 운영되는 서버는 2004년 12월 현재 총 4,958대로 2002년에 비해 약 15% 정도 증가하였다. 운영 체제는 리눅스(Linux)의 비율이 이전에 비해 증가하였고, 서버 용도는 웹 서비스가 가장 높으며, 하나의 시스템에서 웹, 메일, FTP 등 여러 서버를 동시에 서비스하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한다.

재난 복구 백업 시스템은 건물 붕괴, 화재, 수난 등의 재해에 대비한 최소한의 재해 복구 솔루션으로서 1998년 9월 StorageTek 9710 Tape Backup Library를 도입하여 전산원 일부 서버에 대한 백업을 시작하였으며, 2001년 1월 IBM3494 Tape Backup Library를 확충함으로써 자동 백업 체계를 갖추었다. 그 해 10월 백업 장비를 전산원과 도서관에 각각 분산 재구축하여 중요 정보 자산의 데이터 안정성 확보를 위한 이중 자동 백업 체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업무나 연구 용도의 개인용 컴퓨터에 보관한 중요한 프로그램과 데이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사용자가 원격지(전산원) 서버에 자동 백업하고 필요시 복구할 수 있는 PC 백업 시스템을 2001년 12월에 구축하여 2002년 3월부터 정식 서비스하고 있다.

## 제 2 절 교육, 학술 연구, 행정의 정보화

### 1) 교육의 정보화

IT기술의 발달은 대학의 교육 환경에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다. 특히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정보 생산 속도의 증가와 교육 환경의 멀티미디어화, 콘텐츠의 디지털화 등으로 온라인 접근성은 크게 확대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여 국내

많은 대학들이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칠판 판서나 강의자의 음성만으로 구성된 2차원적 강의에서 벗어나 전자 칠판이나 영상, 음향 장비 등 첨단 장비를 이용한 3차원적 멀티미디어 강의를 실시하고, 타율적인 교육에서 자기 주도형 교육으로 변화를 꾀하는 등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다. 또 교육 콘텐츠의 구축과 더불어 일반 강의실에 멀티미디어 시설을 지원하고 화상 강의, 스튜디오형 강의실을 확충하는 등 교육 정보화 시설 확충에도 주력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또한 동영상, 사운드, 이미지 등 다양해진 교수 학습 자료를 제작·편집·가공·활용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시설을 확충하고, e-Learning 시스템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e-Class)을 개발하는 등 IT 기술을 활용한 미래 지향적인 교육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 (1) 교육 환경의 멀티미디어화

최근 대학 교육에서 최첨단 정보 인프라를 기반으로 학습자 중심의 멀티미디어 강의가 급속하게 늘어나 멀티미디어 강의실과 기자재에 대한 요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서울대학교는 글로벌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1999년 BK21 사업 시설 투자 계획의 일환으로 최첨단 강의실과 기자재 설비를 갖춘 멀티미디어 강의동 건립을 결정하였다. 2000년부터 멀티미디어 강의동 건립을 추진하여 2003년에는 2개 동(83동: 인문·사회·예체능계/43-1동: 이공계)을 완공하였다. 강의실 설계는 강사 편의성 극대화, 고장률의 최소화, 유지 보수의 용이성, 기기 운용 및 운영자의 최소화 등을 고려함으로써 교내 환경에 적합한 멀티미디어 환경을 조성하였다.

멀티미디어 강의동은 강의실과 세미나실, 정보검색실로 구성하고 있으며, 각 동의 주요실 현황은 <표 1-3-2>와 같다.

한편 멀티미디어 강의동 건립과 함께 일반 강의실의 멀티미디어화, 즉 e-강의실의 필요성 또한 대두하였다. 서울대학교는 강의 환경 개선에 필요한 표준안을 도출하고자 2002년 연구과제를 통해 버클리 캘리포니아대학교, 스탠퍼드대학교, MIT 등 외국 대학 사례를 조사하였다. 이 연구 결과를 통해 강의 환경 개선에 필요한 표준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일반 강의실의 멀티미디어 환경 구성 기준안



그림 1-3-7 멀티미디어 강의동(83동) 대형 강의실

〈표 1-3-2〉 멀티미디어 강의동 강의실·세미나실 현황

(단위: 명, 곳)

멀티미디어 강의동 83동				멀티미디어 강의동 43-1동							
구분	수용 인원	수	구분	수용 인원	수	구분	수용 인원	수			
강의실	대형 강의실	262	1	강의실	대형 강의실	287	1	강의실	대형 강의실	287	1
	중형 강의실	204	2		중형 강의실	149	2		중형 강의실	149	2
	소형 강의실	122	3		소형 강의실	129	2		소형 강의실	129	2
세미나실	중형 세미나실	70	4	세미나실	중형 세미나실	80	1	세미나실	중형 세미나실	80	1
	소형 세미나실	37/25	2/2		소형 세미나실	52	2		소형 세미나실	52	2
	화상 세미나실	61	1		화상 세미나실	38/20	1/1		화상 세미나실	38/20	1/1
	정보검색실	31	1		정보검색실	36	1		정보검색실	36	1

으로 확정, 강의실 신축 및 개보수 설계 시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일반 강의실의 멀티미디어 강의 지원을 위한 기자재 설치에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보다는 강의동의 신축 및 개보수 시에 반영하여 실행하고 있다. 강의실의 네트워크 지원은 유선의 경우 100% 보급을 달성하였으며, 무선 환경은 KT와 산학 협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서울대학교에 네스팟을 도입하여 한 차원 높은 네트워크 환경을 제공하게 되었다. 모든 일반 강의실에 대한 멀티미디어 지원은 계속 사업의 성격으로 시설 확충과 유지 보수, 노후 장비 교체가 일정한 주기로 순환할 것이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와 같은 단순 투자 계획보다는 새로운 교육 학습과 함께하는 강의실 환경 개선이 더욱 요구된다.

## (2) 웹 공간을 이용한 교육, e-Learning

현재 웹 공간을 활용한 보조 교육은 e-Learning이라는 형태로 추진하고 있다. e-Learning 시스템이란 웹 공간을 활용하여 학습자에게 학습을 유도하는 학습 시스템을 중심으로, 학습자가 학습 활동 중 발생하는 문제들을 쉽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 시스템을 말한다. 또한 학습자가 웹을 통해 다른 학습자나 교수자, 운영자와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다.

2004년 1월 국회는 e-Learning산업발전법을 통과시켜 공공 기관과 교육 기관의 e-Learning 시행을 의무화했으며, 이에 따라 대학의 정규 교과 과정에도 e-Learning 도입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대학에서는 교수자와 학습자가 e-Learning을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한편,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다각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서울대학교는 1998년부터 3년 동안 교육인적자원부의 가상 대학 프로그램 시범 운영 대학으로 선정되어 시범적으로 가상 강의를 실시한 바 있으며, 교수 학습개발센터에서는 웹 클래스를 통해 2001년 이후 학기별로 웹 보조 수업을 지원하여 왔다. 한편 정보화포털 시스템 CUG 내에 있는 수업 게시판 이용자가

급증하여 기능을 보완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2003년 정보화포털 시스템구축과 함께 수업 게시판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하였다. 그런데 웹 클래스와 수업 게시판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이용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2004년 9월부터 중앙전산원은 수업 게시판과 웹 클래스를 통합한 e-class라는 수업 커뮤니티를 구축하였다.

또한 중앙전산원에서는 2005년 2월에 서울대학교 구성원뿐만 아니라 학외 구성원들과 의견을 교류할 목적으로 'SNU-Zone' (<http://community.snu.ac.kr>)을 신설하였다. SNU-Zone에서는 e-class를 비롯하여 서울대학교 구성원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동문회, 학과, 친목 등의 항목을 포함한 커뮤니티와 블로그, 또 논문이나 리포트와 같은 고급 지식 공유를 위한 지식카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내 주요 기관과 연구소 등에 등재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학내 전산망의 통합 검색 기능도 이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웹 공간을 활용한 교육은 대학의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새로운 교육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활용 가능하다. 그렇지만 온라인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사 관련 제도 개선, 표준화된 콘텐츠 개발, 교수자 지원, 전문 인력 확보, 인프라 확충 방안 등과 같은 현안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 서울대학교는 대학 차원의 정책 마련을 통해 보조 수업 차원을 넘어 통합된 디지털 학습 환경인 'Blended e-Learning' 과 같은 차세대 온라인 교육 방법을 개발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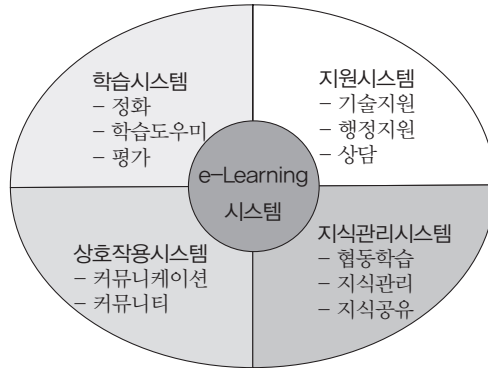


그림 1-3-8 e-Learning 시스템의 구성 요소

## 2) 학술 연구의 정보화

학술 연구는 교육과 더불어 대학의 핵심 기능이다. 학술 연구 분야의 정보화는 최신 학술 정보와 학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더 풍부하게 제공하여 대학 구성원의 연구 및 학습 활동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또 다양한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해 준다.

‘대학의 심장’으로서 학술 연구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는 서울대학교 도서관의 정보화 동향은 전자도서관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전자도서관은 시설 중심의 도서관에서 이용자 서비스 중심의 도서관으로, 또 자료의 소재 안내 위주에서 자료 원문의 직접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한층 진일보한 도서관을 지향한다. 또한 변화하는 정보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종합학술정보시스템을 개발하여 다양한 학술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확충하고 있다.

한편 규장각은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구축 사업의 대표 주관 기관으로서 역사 정보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다. 규장각은 역사 정보화의 표준화와 공동 활용을 위한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여 한국 역사 정보의 전 세계 보급을 위한 시스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박물관은 또한 보유 자원의 정보 공유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가상 박물관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 대학 차원의 특성화된 연구 인프라 기지를 육성하여 연구 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전문연구정보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 전문연구정보센터는 전국의 연구자들에게 연구 정보를 제공하는 것 외에 학내 학술 연구 정보를 확보하고 공유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1) 전자도서관의 구축

서울대학교 도서관은 BK21 정보 인프라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2000년부터 전자도서관 구축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2001년 10월에는 전자도서관 구축팀을 별도로 구성하고 국내외 전자도서관 사례들을 연구 분석하여 국내 현실에 맞는 최적의 모델을 제시하도록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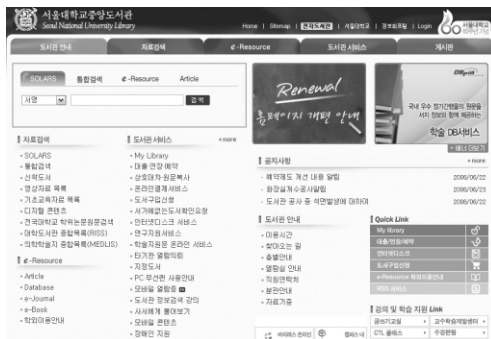


그림 1-3-9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였다.

2002년 2월에 발행된 『서울대학교 전자도서관 디지털 콘텐츠 구축을 위한 표준화 연구』라는 보고서는 전자도서관 구축 사업을 추진할 때 반드시 선행해야 할 중요한 정책적·기술적 현안을 제시하였다. 정책적 현안으로 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 방법과 디지털 대상 자료의 선정 지침, 저작권과 지적 재산권에 대한 정책 마련 문제를 들었으며, 기술적 현안으로 서비스의 질과 경제성을 고려한 저장 포맷 및 표현 표준, 디지털 자료의 서지 정보라 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의 형식, 저작권 및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한 기술 문제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전자도서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부 지침을 명확히 규정하고, 2002년 2월부터는 본격적인 전자도서관 구축 사업을 추진하였다. 2002년 6월에는 학술정보시스템과 공동으로 운용할 목적으로 전자도서관 시스템을 가동할 메인서버와 스토리지 장비, 기타 NT장비 등을 도입하였다. 1개월 동안의 시범 운영을 거쳐 7월부터는 학술정보시스템(SOLARS II)을 탑재하여 가동하였고, 2003년 5월에는 전자도서관 시스템을 정식 가동하였다.

전자도서관 구축 사업을 통해 학내 주요 자료를 상당수 디지털화함으로써 학술 연구 정보의 수집과 보존이 가능하게 되었고, 전자도서관 시스템 가동과 더불어 전자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대내외에 서비스함으로써, 서울대학교 구성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서울대학교의 귀중한 자료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2006년 6월에는 도서관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전자도서관과 학술정보시스템의 통합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유니코드 지원, 모바일 열람증, RSS 서비스 등과 같은 다양한 이용자 서비스를 추가하였다.

## (2) 역사 정보의 디지털화

2006년 2월 서울대학교 한국학연구소와 통합하여 ‘서울대학교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하 규장각)으로 명칭을 변경한 서울대학교 규장각은 현재 고도서 17만 5천여 권, 고문서 5만여 점, 책판 및 기타 1만 8천여 장 등의 국학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그중 6종 7,076책이 국



그림 1-3-10 규장각 홈페이지



보로, 8종 28책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데, 한국학 분야의 연구 텍스트로서 이 소장 자료들이 갖는 가치는 실로 무한하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규장각의 정보화 사업은 중요한 소장 자료를 선정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전산망에 공유함으로써 국내외 연구자 및 일반 국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고전적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규장각에서는 2000년부터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민족문화추진회와 더불어 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구축 사업에 참여하였다.

규장각은 귀중한 국학 자료와 유능한 연구 인력을 갖추었다는 장점을 십분 활용하여, 여타의 기관과는 다르게 원 자료를 그대로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각 자료의 서지 특징, 내용 소개 등을 부가 구축함으로써 고전의 현대적 활용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해 온 규장각의 정보화 사업 현황을 정리하면 <표 1-3-3>과 같다.

현재까지 완성된 사업 결과는 규장각 홈페이지(<http://e-kyujanggak.snu.ac.kr>)에서 목록, 해제, 고도서, 고문서, 조선왕조실록, 일성록, 의궤 등의 디렉토리로 서비스하고 있다.

### (3) 가상 박물관으로의 초대

서울대학교 박물관은 1993년 1,800여 평의 신축 건물로 이전하여 대학 박물관으로서 는 최초로 종합 박물관을 지향하고 있다. 고고 역사 분야, 전통 미술 분야, 인류 민속 분야, 현대 미술 분야, 자연사 분야에 이르는 다양한 종류의 유물과 창작품을 소장하고 있으며, 각종 특별 전시 및 소장품 상설전시를 통해 지역 사회에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21세기를 맞아 연구 중심의 박물관, 사회 교육 기관으로서의 박물관, 중

합 문화 공간으로서의 박물관, 창의적인 박물관, 열린 박물관 등의 박물관 지향 목표를 채택하여, 연구·전시·교육 분야와 함께 국제 사회, 지역 사회 및 대학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다. 박물관에서는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유물과 관련된 학술 정보를 관리하고, 국내외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 시스템으로서 2001년에 가상박



그림 1-3-11 박물관 홈페이지

〈표 1-3-3〉 규장각 정보화사업 추진 현황

사업 연도	사업 기간	사업 내용
1차년도	1999~2000년	고도서 256종 1,997책에 대해 이미지와 텍스트 DB를 구축하였고, 목록 5,000여 종, 국문 해제 2,000여 종, 영문 해제 500종을 DB로 구축하였다.
2차년도	2001년 9월 24일~ 2002년 7월 17일	고도서 『일성록』 2,380책과 『내각일력』 1,249책을 이미지와 텍스트로 디지털화하였으며, 고지도는 1872년 군현 지도 중 375도엽과 「동여도」 125도엽을 이미지로 디지털화하고 해제를 작성하였다. 또한 목록 5,000종, 국문 해제 2,000종, 영문 해제 500종을 작성하여 DB로 구축하였다.
3차년도	2002년 11월 5일~ 2003년 9월 4일	『승정원일기』 3,045책 747,564면을, 사회사 자료 180책 58,156면을, 근대 정부 기록류 358책 71,938면을 이미지 제작하였고, 고지도는 1872년 제작한 평안도 군현 지도 85도엽과 비변사 방안 지도 657도엽을 이미지로 디지털화하였다. 그리고 『내각일력』 1,249책, 『일성록』 1,516책, 서지 목록 49,500매를 XML 태깅하였다.
4차년도	2003년 5월 26일~ 11월 30일	고도서 2500만 자, 329,302면을 원문 텍스트, 이미지, XML 태깅하였고, 고문서 7,500건을 목록 작성하고, 『사법품보』 『일성록』 288,063면을 이미지 색인 작업하였다.
5차년도	2004년 4월 22일~ 11월 30일	상소류 10만 면, 22,056,874자를 이미지 제작, 원문 텍스트화하였고, 근대정부 기록류 30만 면을 이미지 제작, 색인 작업을 하였고, 고지도 859도엽을 이미지 제작, 색인, 해제 작업을 하였다.
6차년도	2005년 3월 30일~ 11월 30일	『조선왕조실록』(정족산본) 1,187책 110,192면의 이미지를 컬러로 제작하였고, 책별 3매 가량의 해제를 작성, 구축하였다. 『조선왕조실록』 등 규장각 소장 주요 연대기 자료의 동일 년, 월, 일 정보를 함께 검색할 수 있는 횡적 검색 기능을 신설하였다. 왕실 자료를 주제별로 구분하여 이 중 ‘왕실의 연원’과 ‘왕실의 정치’에 해당하는 자료 650만 4백 자와 3만 면을 텍스트와 이미지로 디지털화하였다. 『안동 도회도』를 비롯한 고지도 800도엽을 이미지로 디지털화하고 해제를 작성하였다.
7차년도	2006년 3월 30일~ 11월 30일	왕실자료 중 ‘왕실의 연원’과 ‘왕실의 정치’에 해당하는 자료 6백만 자와 6만 면을 텍스트와 이미지로 디지털화하고 있다. 또한 왕실자료에 대한 상세 해설을 구축하여 일반인의 자료 이해를 높이고자 하고 있다. 『지승』을 비롯한 고지도 500도엽을 이미지 디지털화하고 해제를 작성하고 있다. 사부분류별 목록 작업 및 각 자료에 고유 번호를 붙이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물관을 구축하였다.

가상 박물관(<http://www.snunm.org>)은 학술 정보 영역, 교육 정보 영역, 전시 정보 영역으로 나뉜다. 학술 정보 영역은 2만 9천여 점의 박물관 소장 유물에 대한 검색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2003년과 2004년에 걸친 디지털 콘텐츠 구축 사업을 통해 소장 유물의 정보를 추가 입력하는 등 정보를 계속 축적하고 있다. 교육 정보 영역은 박물관 관련 전공 분야의 전문 교육 강좌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교양 교육 강좌를 포함하고 있으며, 전시 정보 영역은 고고 역사 전시실, 전통 미술 전시실, 인류 민속 전시실, 자연사 전시실, 현대 미술 전시실 등 소장품 상설 전시실 5곳과 박물관 기획의 특별 전시를 소개하는 기획 전시실을 포함한다. 그 외 특별 강의 안내와 공지 사항을 전달하는 박물관 소식을 비롯하여, 사이트맵, 국내외 관련 사이트, 게시판 등을 포함하는 일반 정보 소개와 박물관 안내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 2004년에는 박물관의 전시 정보, 공지, 안내를 중심으로 한 영문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전 세계에 서울대학교 박물관의 활동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 (4) 전문연구정보센터의 설립

전문연구정보센터는 기초 연구 활동의 주요 요소가 되는 연구 기기, 연구 소재, 연구 정보에 대한 대학 차원의 특성화된 연구 인프라 기지를 육성하고 대학의 연구 기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과학재단이 1995년부터 지원 육성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특정 대학을 거점으로 전국적인 공동 이용이 가능한 사업, 대학의 우수 연구 그룹이 운영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사업, 대학의 기존 연구 자원의 효율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을 그 기본방향으로 추구하고 있다.

정보화 사회에서 전문 연구 정보는 교육과 연구에서 활용하고 기술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지적 공유 자원인 동시에, 경제 활동에 이용할 경우 무한한 자원 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국가 자원이다. 전문연구정보센터는 연구 정보의 최대 생산자이자 이용자인 대학이 주체가 되어 정보의 공동 활용 체제를 구축하고 분야별 전문 연구 정보를 데이터베이스

그림 1-3-12 농생명과학연구정보센터 홈페이지



〈표 1-3-4〉 한국과학재단 지정 전문연구정보센터

no.	센터	설치 대학	URL
1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서울대학교	<a href="http://www.AURIC.or.kr">http://www.AURIC.or.kr</a>
2	기계공학연구정보센터	부산대학교	<a href="http://metric.pusan.ac.kr">http://metric.pusan.ac.kr</a>
3	농생명과학연구정보센터	서울대학교	<a href="http://www.alric.org">http://www.alric.org</a>
4	물리학연구정보센터	서울대학교	<a href="http://icpr.snu.ac.kr">http://icpr.snu.ac.kr</a>
5	보건연구정보센터	전남대학교	<a href="http://www.richis.org">http://www.richis.org</a>
6	산업공학연구정보센터	포항대학교	<a href="http://iems.net">http://iems.net</a>
7	생물학연구정보센터	포항대학교	<a href="http://bric.postech.ac.kr">http://bric.postech.ac.kr</a>
8	수리과학연구정보센터	한국과학기술원	<a href="http://icms.kaist.ac.kr">http://icms.kaist.ac.kr</a>
9	의약품연구정보센터	숙명여자대학교	<a href="http://dric.sookmyung.ac.kr">http://dric.sookmyung.ac.kr</a>
10	의학연구정보센터	충북대학교	<a href="http://www.medric.or.kr">http://www.medric.or.kr</a>
11	자동차기술연구정보센터	서울대학교	<a href="http://icat.snu.ac.kr">http://icat.snu.ac.kr</a>
12	재료공학연구정보센터	경북대학교	<a href="http://icm.re.kr">http://icm.re.kr</a>
13	화학공학연구정보센터	고려대학교	<a href="http://infosys.korea.ac.kr">http://infosys.korea.ac.kr</a>
14	환경지질연구정보센터	연세대학교	<a href="http://ysgeo.yonsei.ac.kr">http://ysgeo.yonsei.ac.kr</a>
15	섬유이류연구정보센터	영남대학교	<a href="http://www.ricta.or.kr">http://www.ricta.or.kr</a>
16	컴퓨터연구정보센터	중앙대학교	<a href="http://cseric.cau.ac.kr">http://cseric.cau.ac.kr</a>
17	토목연구정보센터	명지대학교	<a href="http://www.ceric.net">http://www.ceric.net</a>
18	항공우주연구정보센터	인하대학교	<a href="http://www.aric.or.kr">http://www.aric.or.kr</a>
19	해양수산연구정보센터	여수대학교	<a href="http://kosfic.yosu.ac.kr">http://kosfic.yosu.ac.kr</a>
20	환경공학연구정보센터	포항대학교	<a href="http://www.dicer.org">http://www.dicer.org</a>

화하여 제공함으로써, 학내외 교육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해당 분야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16개 대학에 센터 20곳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는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농생명과학연구정보센터, 물리학연구정보센터, 자동차기술연구정보센터 등 4곳이 동 사업의 지원을 받아 해당 분야에서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3) 행정의 정보화

#### (1) 행정정보시스템

행정정보시스템은 학내 행정 업무를 효과적이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

는 정보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학생이 주요 서비스 대상인 '학사 행정' 과 교직원이 주요 서비스 대상인 '일반 행정', 그리고 교수가 주요 서비스 대상인 '교육·연구 행정' 으로 나뉜다. 학사 행정에서는 수업 관리(수강, 강의 시간표, 졸업, 성적 등), 등록/장학, 병역, 기숙사 이용, 증명서 신청 등의 처리 및 조화가 가능하며, 일반 행정에서는 인사, 급여, 병역, 작업 의뢰, 재무/회계 등을 처리할 수 있고, 교육·연구 행정에서는 연구 업적, 연구 과제, 연구비 등의 관리가 가능하다.

시스템 전체의 구성은 C/S 방식과 웹 방식이 7 : 3 비율로 되어 있다. C/S 방식은 주로 행정 업무를 지원하며 소수의 해당 업무 담당자만을 위한 다양한 메뉴가 있고, 웹 방식보다 상대적으로 보안성이 강하다. 이용자 간의 권한 한계도 선명하여, 맡은 업무별로 이용자 메뉴를 엄격히 제한한다. 이용 권한을 갖기 위해서는 해당 업무의 주무 부서(주무자)에 요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권한 요청은 온라인상에서 실시간으로 처리된다. 반면 웹 방식은 다수 이용자를 대상으로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현하고 있다.

행정정보시스템은 1980년대 자체 개발(in-house)로 부분적으로 시작하여 1998년 외주 용역 개발(SI: System Integration) 단계를 거쳐 2004년부터는 차기 시스템 구축을 조심스럽게 검토하며 준비하고 있다.

시스템 초창기의 자체 개발은 급여 계산 등의 소규모 요구를 자체 프로그래머 직원을 활용하여 개발하는 방식으로, 수작업으로 처리할 일을 프로그램으로 대체하는 수준이었다. 그 후 전산화 수요가 다양한 업무 범위로 확대되고 인터넷과 네트워크가 보편화되자,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단말 조직과 중앙 조직에서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크게 대두하였다. 또한 네트워크를 통해 한꺼번에 접속하는 다수 이용자를 기존과 같은 성능 관리로는 감당하기 어려워졌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접근이 합법 이용자뿐만 아니라 불법 이용자에게까지 용이해지면서 정보 보안 기술이 새롭게 요구되었다.

SI는 위와 같은 이유로 한계를 드러낸 자체 개발 방식을 대체한 것이다. 이것은 시스템 통합 제공 업체를 통해 용역으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한 후, 개발 업체와 개발비의 15% 선에서 매년 유지 보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SI 방식으로 개발한 행정정보시스템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학내 업무를 일반 행정, 학사 행정, 교육·연구 지원 행정 3가지로 나누어 관련 업무끼리 메뉴를 통합하였다.

초기에는 통합 메뉴를 제공하여 이용자 만족도가 높았으나 점차 처음에는 예측하지

못한 SI 시스템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첫째 현재의 정보 시스템은 개발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까닭에 개발자가 이적하면 개발 업체 역시 유지 보수 능력을 보장할 수 없었다. 또한 개발자의 프로그래밍 개성과 업무자의 업무 처리 유형을 조직 내에서 표준화하지 못하여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업무 요구가 바뀌고 따라서 프로그램 재사용률도 떨어졌다. 둘째 주무처 각각의 요구 사항을 통합 정리하지 않고 구현한 까닭에 데이터들이 여러 해 쌓이면서 미입력으로 인한 데이터 누락, 동일 데이터 값의 상호 불일치(예를 들면 학적의 주소와 예비군 주소) 같은 문제가 발생하여 데이터 통합 활용이 기대에 못 미쳤다. 셋째 정보시스템 각 요소 기술의 상호 간 지원 가능성 여부가 불투명하였다. 사실상 이 시스템은 메뉴만 통합하였을 뿐이고 정작 시스템 기능은 과별 또는 담당자 개인별 부분 관리 중심으로 마련하였다. 따라서 변경 사항이 축적되면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 시스템 성능이 한계를 드러내어 수명을 다할 것이 예상되었다.

그래서 2003년 3월에 기존 SI 방식의 한계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차세대행정정보시스템기획단’을 구성하였다. 기획단은 약 6개월에 걸쳐 행정정보시스템의 현안과 발전 방향에 대해 학내 구성원의 다양한 시각을 수렴하여 검토한 결과를 간부 회의에 보고하였다. 그렇지만 보고 내용에 따라 국립 거점 대학과 함께 ‘차세대행정정보시스템’을 공동 개발할 경우 소요 예산은 81억 원이 예상되었으며, 서울대학교 단독 추진 시에도 69억 원이 들 것으로 추정되었다. 결국 투자 재원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이 계획은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다.

2005년 2월 행정정보시스템 재구축을 준비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동년 5월까지 4개월 간 약 1억 원의 예산으로 ‘기초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사업은 갈수록 개인 정보 보호가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현 행정정보시스템의 권한 관리 부분을 보완하고 시스템의 기록 관리를 강화함과 동시에, 차기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시 현황 파악을 위한 현 시스템의 메뉴별 활용도 측정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통해 차세대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 비용을 산출할 때 거품이 제거될 것이라 기대하였다.

통합행정정보시스템 재구축을 위한 중장기 계획은 향후 서울대학교 행정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만큼 여러 가지 측면을 복합적으로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 이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표 1-3-5>와 같이 제시하였으며, 2005년 12월 ‘행정정보시스템혁신추진단’을 구성하여 2006년 현재 활동 중에 있다.

〈표 1-3-5〉 행정정보시스템 재구축 로드맵

사전 정비 (2005년 2월~11월)	전략 계획 수립 (2005년 12월~ 2006년 8월)	1단계 구축 (2006년 12월~ 2007년 12월)	2단계 구축 (2008년 1월~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 환경 정비 사업</li> <li>-현 시스템 규모 파악 및 정비</li> <li>-메뉴별 이용도 분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및 1단계 사업 계획서</li> <li>-현행 업무 프로세스 분석</li> <li>-Best Practice 분석 비교</li> <li>-To-Be 프로세스 설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 행정 및 교육·연구 행정, 2단계 사업 계획서</li> <li>-To-Be 모델에 맞는 시스템 구축</li> <li>-관련 정책 정비</li> <li>-데이터 표준화</li> <li>-교육, 매뉴얼, 변화 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사 행정 및 일반 행정 경영 지원</li> <li>-To-Be 모델에 맞는 시스템 구축</li> <li>-관련 정책 정비</li> <li>-데이터 표준화</li> <li>-교육, 매뉴얼, 변화 관리</li> </ul>

**(2) 전자문서시스템**

행정 정보화의 또 하나의 흐름인 전자문서시스템(전자 결재)은 문서의 기안, 검토, 협조, 결재, 등록, 시행, 분류, 편철, 보관, 보존, 이관, 접수, 배부, 공람, 검색, 활용 등 모든 처리 절차를 통합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2002년 12월 26일 사무관리규정의 개정(대통령령 제17811호)과 함께 전자 문서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기안문과 시행문을 하나로 통합한 새로운 서식을 마련하였고, 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를 통해 온라인 문서 유통이 가능한 새로운 전자문서시스템을 2004년 7월 오픈하여 운영하고 있다.

전자문서시스템의 업그레이드 이후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전자 문서 처리 비율의 증가다. 처리과의 수기 등록, 접수 대장이 사라지고 모든 문서는 전자문서시스템 기록물철 등록 대장에 등록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학내 전자 문서 처리 비율이 3배 이상 폭증한 것과 달리 학외 온라인 전자 문서 유통의 활용률은 저조하여 2004년 7~12월 동안 1만여 건의 학외 송수신 문건 중 발송은 8%, 접수는 1%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이는 전체 공공 기관의 유통 센터 연동률이 저조하고 개인 이용자에 대한 온라인 유통의 편리성 홍보가 충분치 않았으며, 전체 학외 문서의 40%를 주고받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자체 유통 센터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전자문서시스템은 서울대학교만의 단독 시스템이 아니고 문서유통시스템, 행정표준코드시스템, 정부디렉토리시스템, 자료관시스템, 기록보존시스템 등 외부 시스템과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그러므로 문서 처리 전반에 걸쳐 서울대학교의 편익에 따라

독자적으로 변형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앞으로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이용자들에게 전자 문서 이용의 편리함을 적극 홍보하면서 전자문서시스템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 제3절 정보와 문화

### 1) 캠퍼스 정보 문화

인터넷의 괄목할 만한 정보 처리 능력과 양방향적 소통 능력은 이전의 어떠한 매체보다도 확대된 의사 소통의 가능성을 창출한다. 실제로 인터넷상의 가상 공간들은 새로운 정보 기술을 매개로 하는 교류와 소통의 장으로서 캠퍼스 생활에서도 점차 중심 위치를 점해 가고 있다.

국내외 수많은 이용자가 찾는 정보의 제공처이자 대학 홍보의 매체로 역할을 하는 서울대학교 홈페이지는 2006년 현재 각종 교내 사이트 352곳을 연결하고 있다. 그러나 1997년 서울대학교 홈페이지(www.snu.ac.kr)가 처음 운영하기 시작한 당시만 하더라도 자체 홈페이지를 서비스한 단위 기관은 17곳에 불과하였다. 1998년 9월 7일자 『대학신문』은 당시 단과 및 과별 홈페이지 현황을 살펴본 후, 적극적인 홍보 부족과 인터넷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막연한 두려움으로 인해 운영이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며, 지속적인 관리의 부재로 간판만 걸려 있는 수준 이하의 홈페이지 또한 이용자들의 손길이 멀어지게 하는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하였다. 이때만 하더라도 학내의 정보 전산망을 ‘아직은 한정된 사람들의 점유물’로 인식하였고, 언어 폭력, 인격 침해, 현실 공동체 약화, 구성원 간의 단절감 등 가상 공간의 활성화로 인한 다양한 부작용을 우려했지만, 이로부터 불과 10여 년이 흘렀을 뿐인 현재의 캠퍼스에서 인터넷상의 가상 공간은 떨어뜨려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

이처럼 정보화를 통해 캠퍼스 생활이 질적으로 향상된 반면, 개인 정보 등에 대한 불법적인 침해 가능성도 그만큼 증가하였다. 현재 서울대학교 전 캠퍼스에 초고속 전산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모든 교육·연구·행정 자료를 PC와 서버에 저장하고 있고, 또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상호 교류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불법적인 침해가 발생할





그림 1-3-13 서울대학교 홈페이지

경우 그 파급력은 가히 상상할 수 없다. 그러므로 불법적 침해로부터 유·무형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정보 이용자 스스로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선진 정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보 발전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 견인력으로써 건전한

정보 문화의 확산과 내실화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특히 대학은 교육 기관으로서 앞으로 정보화의 발전을 담당할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건전한 정보화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줄 중요한 의무를 지닌다.

(1) 교내 사이트

인터넷의 등장은 이전의 단방향 의사 소통을 쌍방향 의사 소통으로, 단순한 문자 제 공을 문자·그래픽·소리·동영상을 포함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로 바꾸었다. 이러한 추세는 대학 홈페이지가 모든 부분에서 획기적으로 변할 것을 요구하였다. 서울대학교는

〈표 1-3-6〉 학내 단위기관 홈페이지 운영 현황(2006년 4월 1일 현재)

(단위: 개, %)

구분	전체 기관 수	홈페이지 운영 기관 수				
		한글		영문		
		기관 수	비율	기관 수	비율	
교육 기구	110	93	85	35	32	
학사 행정 기구	13	3	23	0	0	
지원 시설	11	10	91	2	18	
연구 시설	63	47	75	14	22	
부속 시설	본부 직할	13	13	100	5	38
	대학 부속	17	16	94	0	0
부속학교	4	4	100	0	0	
국가 지원 연구 센터	41	33	80	11	27	
두뇌한국21 사업단	13	13	100	5	38	
법인 및 기타 기관	11	11	100	4	36	
계	296					

홈페이지를 대학 경쟁력 강화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여, 홈페이지를 이용한 다양한 정보 제공과 적극적 홍보 활동을 위해 인터넷 신기술 동향을 반영한 홈페이지 개선 작업을 실시하여 왔다.

서울대학교는 1997년 4월부터 한글 홈페이지를 운영하였고, 1999년 영문 홈페이지도 개설하였다. 이후 2002년 한글 홈페이지를 재구축한 후 콘텐츠의 현시성 유지를 위한 웹 모니터링 요원 제도를 두었으며, 2003년 7월 입학관리본부, 국제지역원, 정보화본부, 대외협력본부 등 외국 대학 및 학생과 교류가 많은 학내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영문 홈페이지를 재구축하였다. 이후 2006년 2월에는 국·영문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확대하였으며, 특히 영문 콘텐츠를 대폭 강화하였다. 또한 시각 장애인용 홈페이지를 별도로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으며, 대표 홈페이지와 단과대학 홈페이지가 콘텐츠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현함으로써 콘텐츠 관리에 드는 노력을 크게 줄였다.

이와 같은 움직임 속에서 일찍이 학내 단위 기관에서도 홈페이지를 도입하여 운용할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1999년 '단위기관 홈페이지 구축지원사업'은 학내 단위 기관의 홈페이지 운영을 활성화하는 계기였다. 2006년 현재 단과대학 16곳과 전문 대학원 5곳이 모두 국·영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단 국제대학원은 영문 홈페이지만 운영), 이들을 포함한 학내의 약 290여 기관에서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와 교육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홈페이지와 함께 서울대학교로 통하는 또 하나의 관문으로 정보화포털 사이트(<http://portal.snu.ac.kr>)(구 정보광장(SIS))를 빼놓을 수 없다. 정보화포털시스템은 서울대학교 교직원, 재학생, 일부 퇴직자, 졸업생 간의 정보 공유와 유통을 지원하고, 모든 행정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여러 정보 시스템을 연동하여 서비스 창구를 일원화한 종합 정보 시스템이다. 이러한 주요 서비스의 통합으로 포털 서버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커다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서울대학교는 학내 업무 마비 등의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보화포털 시스템의 하드웨어 구성을 이중화했다.

정보화포털의 이용자는 본래 학내 구성원으로 한정하였다. 그러나 졸업생 및 퇴직자가 지속적인 서비스를 끊임없이 요구하여 2004년부터 졸업생 및 퇴직자에 한해 일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지원하다가 2006년 4월 계정 관리 시스템을 재구축하여 졸업생 및 일반인까지 모든 서비스의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였다. 그렇지만 동시

에 관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비스 접근에 대한 보안도 강화하였다.

또한 2006년 4월부터는 통합 인증 시스템을 구축하여 서울대학교 통합 ID(포털 ID)로 한 번 로그인을 하면 포털뿐만 아니라 도서관, 교수학습개발센터 등의 학내 정보 시스템도 별도 인증 과정 없이 이용하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기존의 서버별 인증 시에는 ID/PW를 암호화하지 않아 해킹 등에 취약한 점이 있었으나 통합 인증 서버는 이런 점을 집중적으로 보완해 정보 보호를 한층 더 강화했다.

한편 서울대학교 정보 포털 커뮤니티인 스누라이프(www.snulife.com)는 서울대인들의 캠퍼스 생활을 교류하는 대표적 공간이다. 스누라이프는 2000년 4월 서울대인을 위한 무한 봉사를 모토로 10명이 채 안 되는 서울대생들이 만들었다. 그렇지만 2004년 현재 회원 수가 이미 3만 5천여 명에 이르러 명실 공히 학생들을 위한 서울대학교 내 최고의 커뮤니티가 되었다.

스누라이프는 강의 정보, 커뮤니티, 레스 카페, 주거 정보, 교육 카페 등으로 메뉴를 구성하고 있는데, 학생들은 이 메뉴들의 게시판을 통해 수업 정보를 공유하고 스터디 모임 구성원을 모집하기도 하며, 학교 주변 음식점과 맛집, 또는 하숙 및 자취 정보를 교류한다. 뿐만 아니라 이곳 게시판은 학내외 주요 현안과 이슈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벌이는 서울대인의 공론의 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밖에 서울대학교 구성원 개개인의 블로그나 미니 홈페이지도 인터넷상에서 상호 교류를 위한 작지만 소중한 공간들이다. 이러한 가상 공간을 통한 상호 교류는 점점 더 활성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진보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이 공간이 미래에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는 이 공간에 접속하는 수많은 이들의 몫으로 남아 있다.

## (2) 정보 보호의 과제

정보 보호는 컴퓨터 시스템에 존재하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데이터에서 유추 가능한 모든 유형의 정보를 내부 또는 외부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정보 보호는 데이터와 시스템을 불법적인 자료 공개·변조·파괴 등으로부터 보호하여 정보의 비밀성과 무결성, 가용성을 보장함으로써 피해 규모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울대학교는 정보 보안에 대해 그 동안 국지적으로 대응해 왔으나, 2002년 2월 중앙전산원에 정보보안팀(SNU-CERT)을 신설한 것을 시작으로 네트워크 보안, 주요 서버 및 데이터 보안, 사용자 PC 바이러스 방역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SNU-CERT(Seoul National University-Computer Emergency Team)에서는 전화,

이메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안 사고 접수를 받는다. 일단 사고 접수를 하면 사고를 분석 처리하고 일지로 문서화하여 사고 처리를 완료하며, 사고 처리 문서를 분석하여 매월, 매년 침해 사고 통계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것은 학내 사용자에게 해킹 및 바이러스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토록 하는 보안 교육 프로그램이나 정보 보안의 진로를 모색할 때 참고 자료로 이용한다.

한편 서울대학교에서는 급증하는 정보 침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빠른 시간 안에 발견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2003년부터 통합보안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2003년도 1차 통합보안시스템 구축에서는 보안관제실을 마련하는 한편, 구간 보안 장비를 구축하여 더 빠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4년 7월에는 바이러스 방역 중앙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개인용 컴퓨터 약 2만 대 이상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2005년에는 침입 차단 시스템의 성능을 더 향상시켜 인터넷으로 들어오는 악성 정보 중 DDoS성 정보는 95% 이상 탐지하여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학내 정보 보안의 현 주소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향후 정보 보안의 방향 설정과 정책적인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한 시점임을 감안하여, 2005년 8월부터 12월까지 4개월에 걸쳐 정보 보안 컨설팅을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정보 보안을 위한 7대 핵심 과제를 선정하였고, 진단 결과 도출된 정보 보안상의 위협을 완화하고 단계별 보안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개선 방향과 추진 방향을 새로 수립하였다.

정보화본부에서는 2006년 3월 정보보안팀의 소속을 중앙전산원에서 정보화기획팀으로 개편하여 보안 체제를 한층 강화하였다. 그리고 구성원 개개인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정보 보호에 노력할 수 있도록 정보 보호를 위한 홍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정보화본부는 현재 정보화포털 메인화면의 정보 보안 공지, 게시판, 팝업 창, 공문 등을 활용하여 정보 보안 관련 긴급 조치사항을 제공하고 있으며, 매월 첫째 주 금요일을 서울대학교 정보 보호 클리닝데이로 지정하여 구성원이 정보 보호에 참여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 정보 보호 홍보물을 제작하여 2006년 3월 새 학기에 전 기관에 배포하였는데, 이번 홍보물은 정보 보안 수칙과 PC 보안 점검 매뉴얼 등을 수록한 책받침과 리플릿으로 제작, 학내 곳곳에 비치하여 학생들이 손쉽게 참고



그림 1-3-14 보안관제실 전경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근 사회에서는 정보화의 진전과 함께 개인 정보 유출에 의한 피해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개인 정보 보호의 중요성 또한 크게 부각되고 있다. 서울대학교는 공공 기관의 개인 정보 보호 체계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의 지도 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2002년 6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지침’에 따라 ‘서울대학교 개인정보 보호방침’을 수립하였다. 이후 2005년 9월에 이를 수정하여 최신 내용으로 개정하였으며, 이보다 조금 앞선 동년 6월에 개인 정보 관리 체계를 정립하고, 11월에 ‘서울대학교 개인정보보호 업무추진지침’도 마련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기본 계획의 수립부터 결과 보고에 이르기까지 개인 정보 보호의 연중 업무를 정례화하여 현재 성공적으로 정착시켰다. 서울대학교에서는 이 밖에도 학내 기관별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 정보의 실태를 상세히 조사하여 보호 체계를 정리토록 하고,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정보 보안과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교육을 연 2회 의무적으로 실시케 하는 등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3) 정보화 교육 실시

서울대학교는 구성원의 정보화 소양을 증진하고 교육 환경을 개선할 필요에 따라 학칙 제100조 공개강좌규정과 중앙전산원 제8조 공개강좌규정에 의거하여 교직원 및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컴퓨터 공개 강좌를 실시해 왔다. 공개 강좌란 정규 교육 과정과는 별도로 학술 연구, 직무 훈련, 기술 습득, 교육 증진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단기 연수 활동을 말하는데, 컴퓨터 공개 강좌는 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매 학기마다 특강 형식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제공하였다.

〈표 1-3-7〉 컴퓨터 공개 강좌 편성 내용(2006년 여름)

과목	기타 강의	그래픽 강의	오피스 강의 (MOS 대비)	프로그래밍	무료 강의
강좌	PC 조립 및 유지 보수	Illustrator 기초 및 활용 3D Studio Max Flash 기초 및 활용 Photoshop 중급 및 활용 Photoshop 기초 및 활용	파워포인트 엑세스 워드 엑셀	C++OOP 프로그래밍 C++을 이용한 자료 구조 프로그래머를 위한 Database 모델링 프로그래머를 위한 Oracle 완벽 C언어 프로그래밍 완벽 Java 프로그래밍	한글 2004 활용 Tip MFC를 이용한 Windows 기초 프로그래밍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컴퓨터 활용교육은 교수, 직원의 정보화 능력 격차를 해소하고 정보화 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해 전체 교직원이 오피스 및 인터넷 기초를 습득할 수 있도록 우선 1998년에서 2002년까지 5년 간 실시하였다. 이 기간 동안 교직원 대부분이 기본 소양을 갖춘 것으로 간주하여 2003년 이후부터는 수요자 요구에 맞춘 특강이나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컴퓨터 강좌 콘텐츠를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 밖에 지역 주민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컴퓨터 활용 교육도 실시하였는데, 2004년 겨울 방학부터 전체 컴퓨터 공개 강좌를 컴퓨터 관련 교육 전문 회사인 렉토피아(Lectopia)에 학기별로 단기 위탁하였고, 2006년부터는 1년 단위의 장기 위탁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다. 이로써 컴퓨터 공개 강좌는 학생, 교직원, 지역 주민 등의 구분 없이 신청하면 누구나 들을 수 있게 하였다. '2006년 서울대 여름 COMPUTER 특강'의 경우 그래픽, 오피스, 프로그래밍 등과 관련한 다양한 강좌들을 개설하였는데, 교육 편성은 <표 1-3-7>과 같다.

## 2) 정보화 비전

현재 서울대학교 정보화는 1세대를 지나 2세대로 진입하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 양적 성장을 중심으로 하였던 1세대 정보화는 대학 전반에 걸쳐 정보화 기반을 구축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2세대 정보화는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개선을 균형 있게 추구해야 하는 새로운 과제를 안고 있다. 다시 말해서 서울대학교의 정보화는 먼저 공급자의 관점에서 정보 통신 기술 발전에 따른 기술 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투자 규모를 확충하며, 이미 확보한 정보화 인프라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후속 투자를 지속해야 한다. 동시에 수요자의 관점에서 사용자의 요구 사항을 조사하고 그 수용 체계를 마련하며, 기존 서비스의 편의성과 유용성을 개선하고, 신규 서비스의 활용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동시에 기울여야 하는 시점에 온 것이다.

서울대학교는 '21세기 지식 기반 사회를 선도하는 서울대학교'를 장기 발전의 전망으로 제시하고 있다. 세계 수준의 학문적 수월성을 추구하는 동시에 국가 사회의 국제화 선도를 중요한 목표와 임무로 설정하였으며, 종합 대학의 3대 핵심 기능인 교육, 연구, 사회봉사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대학 기능의 종합화와 학문의 종합화, 그리고 학사-



그림 1-3-15 서울대학교 정보화 비전

석사-박사과정을 연계한 학제의 종합화를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대내외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2003년에 발간된 『2001-2002 서울대학교 정보화 백서』에서는 대학 전체의 발전 전망과 추진 과제를 지원한다는 기본 명제와 임무를 넘어 정보화가 대학의 더 거시적인 패러다임을 이끌 수 있도록 '21세기 지식 기반 사회의 중심지로서 e-campus의 구현'이라는 전망과 함께 '대학 변화의 핵심 동력인 e-Engine의 제공'이라는 전망을 제시하였다. 사회 시스템이 지식 기반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정보화는 단순한 지원 기능을 벗어나 미래 사회의 바람직한 원리를 제시하는 리더십을 보여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세대 정보화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는 것 또한 엄연한 사실이다. 투자 확대를 기반으로 성장 일변도로 발전해 온 1세대 정보화가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지난 수년 간 국가 정보화라는 정책 기치 아래 정보화 기반을 마련하였던 공공 기관의 정보화는 현재 성장 동력이 저하된 실정이다. 또한 정보 인프라의 확충에 초점을 맞춘 기술 주도 지향이라는 기본 방향이 실질적인 사용자 요구의 반영과 가시적 효과의 달성을 목표로 하는 수요 견인 지향으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목표 의식과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서울대학교는 구체적으로 <그림 1-3-15>에 도시한 것처럼 정보 기반, 교육, 연구, 행정, 홍보, 복지의 6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앞으로의 정보화 비전을 제시하였다. 정보 기반 부문은 정보화 서비스의 접근성과 유용성을 높이는 e-Campus의 구축, 교육 부문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학내의 모든 사용자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e-Learning의 확대, 연구 부문은 연구의 효율성과 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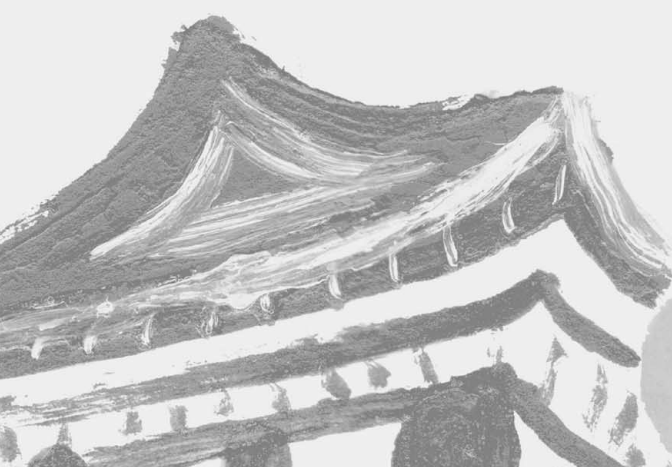
과성을 지원하는 e-Research의 제공, 행정 부문은 행정 업무의 체계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추구하는 e-Administration의 구현, 홍보 부문은 국내외의 다양한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e-Enterprise의 구현을 추구한다.

이와 같은 전망은 1~2년의 단기간 목표를 위해서가 아니라 장기적이고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서 설정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앞으로도 비전의 확립과 개선, 그리고 이를 추구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제 2 부  
운영





## 제1장 운영 체제의 변화와 기구 개편

1946년 8월 22일 ‘국립서울대학교설립에관한법령’의 제정으로 설립된 서울대학교는 1953년 4월 20일부터는 ‘국립학교설치령’, 1970년 4월 8일부터는 ‘서울대학교설치령’의 규정을 받았다. 국립대학교인 서울대학교는 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운영 체제와 행정 기구가 결정되었다. 이 장에서는 관계 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운영 체제의 변화와 기구 개편을 정리하고, 1990년대 중반의 ‘서울대학교법’ 제정 추진, 최근의 ‘국립대학교 법인화’ 논의까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 제 1 절 국립서울대학교의 설립과 초기의 대학 운영(1946~1953년)

#### 1) 국립서울대학교 창건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후 한반도에 진주한 미군은 북위 38도선 이남에서 군정을 시작하였다. 미군정기 교육은 미육군 직제에 따라 공보 부문의 일부로 취급되었으며, 군정 장관 아놀드(Archibold V. Arnold) 휘하에서 교육 부문의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은 육군

대위 라카드(Earl N. Lockard)였다. 학무국장인 라카드 대위는 시카고의 초급 대학 영어 교원 출신으로 제2차 세계 대전 중에 육군민정훈련학교(Civil Affairs Training School)에서 일본의 교육에 관한 단기 훈련을 받은 사람이었다. 라카드와 함께 교육을 받은 에레트(Paul D. Ehret)는 『제국주의의 교육척어와 수신 교과서에 대한 분석』이란 연구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이후 미군정은 그를 학무차장으로 임명했다. 이들은 한국의 교육 실정에 어두웠기 때문에 한국인의 판단에 크게 의존하였다.

라카드에게 많은 도움을 준 사람은 오천석이었다. 오천석은 1921년에 코넬(Cornell)대학교를 졸업한 후 노스웨스턴(North Western)대학교에서 대학원과정을 밟았으며, 다시 콜롬비아(Columbia)대학교로 옮겨 사범대학에서 학업을 마치고, 1932년에 귀국하여 약 10년 간 보성전문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 오천석은 한국의 교육계 지도자 7명을 추천하여 1945년 9월 22일 한국교육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이 위원회 위원은 11월에 10명으로 늘어났다. 이때 위원은 초등 교육 담당 김성달, 중등 교육 담당 현상운, 전문 교육 담당 유억겸, 고등 교육 담당 김성수, 교육 전반 담당 백낙준, 여자 교육 담당 김활란, 일반 교육 담당 최규동, 의학 교육 담당 윤일선, 농업 교육 담당 조백현, 학계 대표 정인보였다. 한국교육위원회의 공식 성격은 자문 기관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교육 부문의 중요 문제를 모두 심의 결정하였고, 각 도의 교육 책임자, 기관장의 임명 등 주요 인사 문제를 다루었다. 구체적으로 각 도의 학무국장, 공립중등학교 교장, 대학장을 선발 인선하는 일부터 학무국 관리들을 선임하는 일까지 전담하였다. 위원회는 우선 학무국 직원을 한국인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12월 19일 유억겸이 한국인 학무국장에 임명되었다.

한편 학무국은 1945년 11월 23일 교육계와 학계 권위자 100명을 초청하여 조선교육심의회(이하 심의회)를 구성하였다. 이들 100명 가운데 28명이 한국민주당 소속이었으며, 7명이 민족청년단, 그리고 31명이 흥사단 소속이었다. 이들 단체의 이념적 성향은 자유주의와 반공 이념, 그리고 온건한 민족주의가 특징이었다. 심의회를 중심으로 형성된 교육 주도 세력은 미군정 정책 수행의 기본 방향을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하였다. 심의회는 주로 교육 이념과 교육 제도의 정립 문제에 대하여 심의하였다. 심의회는 교육 이념으로서 민주주의와 민족주의에 토대를 둔 '홍익인간(弘益人間)'을 채택하였다. 이에 연희전문학교 교수였던 백남운은 홍익인간이 일본 제국주의의 '팔굉일우(八宏一宇)'의 재판이라 하여 채택을 강력하게 반대하였다. 교육 제도는 종래의 소학과 중학의 이원제를 배격하고 미국의 학제를 모방한 6·3·3·4제로 일원화하기로 결정하였다.

학무국은 1946년 3월 29일 문교부로 승격되어 초대 문교부장에 유억겸, 차장에 오천석이 취임하였다. 위와 같은 작업들을 일단락 지은 문교부는 고등 교육 기관 개편에 착수하였다. 문교부는 1946년 4월에 시범적으로 경성대학 의학부와 경성의학전문학교의 통합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두 학교는 모두 이 안에 반대하였다. 경성대학 측은 경성의 전 학생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자신들의 격을 저하시키는 일이라고 주장하였고, 경성의 전 측도 장구한 역사를 가진 학교를 없앨 수 없다고 반대하였다.

이에 문교부는 고등 교육 기관을 부분적으로 개편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전면적인 개편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전면적인 개편에 관한 구상은 발의자인 문교부 차장 오천석이 맡았다. 오천석은 대규모 종합대학교를 계획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시내와 그 근교의 관·공립 고등 교육 기관을 통합하여 8개 단과대학으로 만들고, 음악과 미술 전공을 위한 예술대학을 신설하는 동시에 그 위에 대학원을 두고자 하였다.

1946년 7월 13일 군정청의 한국인 문교부장 유억겸과 미국인 문교부장 피팅거(Aubrey O. Pittinger) 중령은 국립서울대학교설립안(이하 국대안)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다. 먼저 문교부는 일제 식민지기의 고등 교육 기관을 “일관한 교육적 안(案)도 계획도 없이 조선의 진정한 복리를 무시하고 그때그때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 만들어진 잡연(雜然)한 산물에 불과”하다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고등 교육 기관이 국가에 대하여 최대한 봉사를 할 수 있을까”라는 원칙에 따라, “우리가 이상하는 신 국가 건설에 적합한 고등 교육 기관을 건설”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무용(無用)한 중복과 경쟁이 있어 국가의 재정을 낭비한 흔적이 심하고 나아가서는 적은 독립한 기관들이 각기 소왕국(小王國)을 형성하고 균용할거하여 있어 피차간에 아무런 연락도 협조도 없”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동아일보』 1946년 7월 14일자),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기존 학교를 폐지하고 새로운 종합대학교를 설립하기로 결정하였다.

문교부는 종합대학교 설립에 따른 이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종합대학교를 설립함에 따라 각 학교의 기존 건물과 설비를 최대한도로 활용할 수 있다. 둘째, 교수 및 기타 전문 기술자를 최대한도로 활용할 수 있다. 셋째, 일정한 계획 하에 통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재정을 가장 유용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재정상으로 보아 합리적이다. 넷째, 각 방면의 교수와 함께 다채로운 문화 시설과 행사를 향유할 수 있어 학생이나 교직원이 받을 수 있는 교화적(敎化的) 혜택이 크다. 다섯째, 우수한 학자를 양성함에 적합하다.

하지만 이전에 경성대학 의학부와 경성의학전문학교가 문교부의 통합 지시에 반대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통합 대상이 되는 각 학교의 반발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따라서 문교부는 국대안을 발표하면서 반발을 차단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즉 고등 교육 기관은 국가의 소유이지 “결코 독립한 각 기관의 소유거나 그 안에 있는 교직원이나 학생의 전유물이 아니”며, “과거의 각자의 전통 운운하며 소송적, 배타적 태도를 고집하여 이 대국적이고 원대한 국가의 방침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동아일보』 1946년 7월 17일자)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국대안이 발표된 직후부터 이에 대한 반대 운동이 본격화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문교부에서는 8월 22일에 법령 제102호 ‘국립서울대학교설립에관한 법령’을 공포하였다. 먼저 제1조에서 “조선 민족에게 우수한 교육 시설을 제공하고 활용케 하여서 조선 청년으로 하여금 개인으로서의 조선인 자신 및 현대 사회의 국민으로서의 조선 인민의 향상을 위하여 그 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온갖 이익과 기회를 적의(適宜) 이용”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천명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경성경제전문학교, 경성치과전문학교, 경성법학전문학교, 경성의학전문학교, 경성광산전문학교, 경성사범학교, 경성공업전문학교, 경성대학, 경성여자사범학교, 수원농림전문학교 등 10개 학교를 ‘국립서울대학교’로 흡수하고, 국립서울대학교 안에 농림과대학, 상과대학, 치과대학, 사범대학, 공과대학, 예술대학, 법과대학, 문리과대학, 의과대학 등 9개 단과대학과 대학원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국대안 발표에 이어 문교부는 9월에 있을 개학을 위해 곧 총장과 학장을 내정하였다. 이때 내정된 총장과 학장을 보면, 총장은 법학 박사 앤스테드(Harry Bidwell Ansted) 대위, 대학원장은 윤일선, 문리과대학 학장은 이태규, 의과대학 학장은 심호섭, 법과대학 학장은 고병국, 공과대학 학장은 김동일, 농과대학 학장은 조백현, 상과대학 학장은 이인기, 사범대학 학장은 장리욱, 치과대학 학장은 박명진 등이었다.

## 2) 개교 초의 행정 기구와 운영 체제

### (1) 이사회와 총장

서울대학교가 국립 종합대학교로 창건되면서 그 운영을 위한 정책 결정 기관으로 ‘국립서울대학교 이사회’(이하 이사회)를 설치했다. 이사회는 문교부장과 국립서울대학교

총장 및 대학교를 구성하는 각 대학에서 한 대학당 한 명의 비례로 문교부가 추천한 후 남조선과도입법위원의 동의를 얻어 군정 장관이 임명한 이사로 구성했다. 그리고 각 이사들은 이사회를 대표할 만한 자격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전문 방면에서 뛰어난 한국인이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러한 민선 이사회를 설치한 목적은 대학의 자주성과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며 정치에 대한 중립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사의 주요 기능과 임무는 다음과 같았다.

1. 서울대학교의 전반적 방침의 수립.
2. 각 단과대학 및 교육·연구 기관을 포용할 만한 항구적인 캠퍼스 및 기타 시설의 수립 계획서 제출.
3. 자격이 있는 한국인을 서울대학교 총장으로 추천.
4. 단과대학·학부 및 기타 교육 연구 기관의 증설.
5. 봉급 규정의 제의 및 장학금 및 보조금 제도의 제정.
6. 입학·출석·졸업·학위·졸업장 및 증명서 등의 규정 제정.
7. 학술 표준과 학업 규정의 제정.
8. 단과대학과 기타 교육 연구 기관의 운영 및 교직원에 관한 규칙의 제정.
9. 교과 과정의 제정.
10. 기부금 등의 수납 및 관리.
11. 연구비의 지급 및 관리.
12. 학교 재산의 관리.
13. 외국 학생 및 초빙 교수에 대한 지원 제도 마련.
14. 수업료 등의 설정.
15. 교사 양성에 필요한 학교의 설립·운영.

즉 이사회는 서울대학교의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이었다. 그러나 미군정은 민선 이사회가 조직될 때까지 군정 기간 동안 잠정적으로 한국인과 미국인 문교부장과 문교부 차장, 그리고 문교부 고등교육국장 등 총 6명의 문교부 간부로 임시 이사회를 구성하려 하였다. 이에 교직원과 학생들은 격렬하게 반대하였다. 문교부 관료 중심의 임시 이사회가 구성되면 학교 운영이 자치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정부의 개입이 심할 수밖에 없어 대학이 자치권을 박탈당하고 진정한 민주 교육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 반대 이유였다. 당시 문리대 교수였던 이인영은 “학문의 자유는 문교 당국일지라도 이것을 간섭할 바 못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은 자치를 절대로 요구한다. …… 진정한 의미에 있

어서 대학은 교수의 자치, 학생의 자치를 필요로 하며, 자치 이념은 조선인 총장의 취임을 필연화할 것”(『조선일보』 1946년 12월 10일자)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1947년 2월 13일에 러치(Archer L. Lerch) 군정 장관은 이사회 관련 규정의 개정을 약속하였고, 이어 5월 6일에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은 법령 제102호의 제7조 이사회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조선과도정부법률 제1호로 공포하였다. 이에 따라 이사회는 한국인만으로 구성하여 문교부장, 이춘호, 유재성, 이용훈, 최규동, 서광설, 안동원, 이의식, 안중서 등 9명으로 새롭게 구성했다.

한편 국립서울대학교설립에관한법령에 의하면 총장은 이사회가 결정한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었는데, 그 직능과 임무는 다음과 같았다.

1. 이사회를 집행하는 일.
2. 행정과 운영을 감독하고 그 재산을 유지하는 일.
3. 교수회를 소집·주재하는 일.
4. 이사회를 동의할 경우 교내 각 대학의 학장 및 교육 연구 기관의 책임자를 임명하는 일.
5. 총장 자신의 발의 및 교내 각 대학 및 교육 연구 기관의 책임자의 추천에 기반하고 본 이사회를 동의할 경우 교수회원을 임명 또는 결재를 행하는 일.
6. 이사회가 제정한 예산 및 기타 제한 범위 내에서 법률 규정에 준하여 사무원, 기타 직원 및 사용인을 임명 또는 해임하는 일.
7. 교수회원의 정직을 명하고 이사회에 대하여 교수회원의 해임을 제의하는 일.
8. 학위 수여식 및 졸업식을 주재하고 이사회가 제정한 규정 및 방침에 의하여 학위를 수여하며 졸업장 및 증명서에 서명하는 일.
9. 각종 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상을 수여하는 일.
10. 학생을 징학 또는 출교시키는 일.
11. 이사회가 제정한 방침 범위 내에서 본교의 운영, 교직원 및 학생의 행동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제정하는 일.
12. 행사 및 운영에 관한 보고서 및 예산서를 이사회에 제출하며 학년도 말에 연차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는 일.
13. 학교 운영에 관하여 총장 자신의 발의로 이사회에 의안을 제출하는 일.
14. 특수 사항에 대하여 연구 시킬 목적으로 교수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총장의 제의를 이사회에 제출하는 일.

이와 같은 직능과 임무를 가진 총장은 이사회에서 자격이 있는 한국인을 천거하여 본

인의 수락을 받아 임명하도록 하였다. 다만 군정 기간 중에는 군정 장관이 임명하도록 규정하였고, 이에 의해 임명된 초대 총장이 바로 미군 대위 앤스테드(Harry B. Ansted, 1946년 8월 22일부터 1947년 10월 25일까지 재임)였다. 그러나 국대안 자체를 반대하는 당시의 사회 분위기에서 초대 총장을 미군정 관리로 임명한 것은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이것은 서울대학교의 출발에 큰 약점으로 작용했다.

## (2) 설립 초기의 대학 운영

1946년 7월에 미군정의 국대안 발표로 시작된 국대안 파동은 1947년 5월에 이사회 규정이 개정되어 새로운 이사회가 구성되고, 1947년 10월에 한국인 총장이 임명되면서 점차 진정되어 갔다. 그러나 대학 운영과 자치를 둘러싼 문제는 국대안 파동 이후에도 계속 제기되었다.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임명된 최초의 한국인 총장은 제2대 이춘호 총장(1947년 10월 25일부터 1948년 5월 12일까지 재임)이었다. 그러나 그의 임명에도 많은 논란이 뒤따랐다. 당시 사회 분위기는 서울대학교 총장으로 민족적인 인물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춘호 총장은 미국(오하이오(Ohio)주립대학)에서 주로 교육을 받았으며, 타의에 의해서 이기는 하나 친일 단체에 이름이 오른 경력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의 총장 선임은 이사회와 유역겸 문교부장의 찬성을 얻었으나, 남조선과도입법위원회는 인준을 거부했다. 그러나 군정 장관의 재심의 요구에 따라 결국 남조선과도입법위원회는 인준을 가결했다. 이춘호 총장은 맹휴 사건과 등록 파동을 마무리 짓는 한편 서울대학교의 진정한 종합화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1947년 3월에 발표된 ‘대학운영에관한입법결의안’은 대학 운영과 학문 연구에 대한 학장과 교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교수회는 대학 운영에서 거의 소외되었고, 문교부의 지도 하에 이사회와 학장회가 운영을 전담하였다. 교수회와 이사회의 갈등은 1948년 4월에 있었던 연구실 배당 문제를 둘러싼 분쟁에서 단적으로 드러났다.

1948년 4월, 이사회는 문리과대학에 연구실 일부를 법과대학에 양도하도록 명령하였다. 경성대학 법문학부 중 문과는 문리과대학의 일부로, 법과는 법과대학의 일부로 편입되었다. 그러므로 과거 법문학부에서 사용하던 연구실을 문리과대학과 법과대학이 분배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문리과대학에 대하여 연구실 일부를 양도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문리과대학 교수들은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이사회가 개입하



여 명령을 내렸던 것이다. 문리과대학 교수회는 이러한 이사회의 개입을 거부하고 오히려 이사진 총사퇴와 총장 인책을 결의하였다. 이에 대해 이사회도 강경하게 맞서 문리과대학장의 사퇴를 결의하여 통고하였고, 이에 맞서 문리과대학 교수 일부는 사직원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결국 이러한 진통 속에서 1948년 4월 16일 이춘호 총장이 사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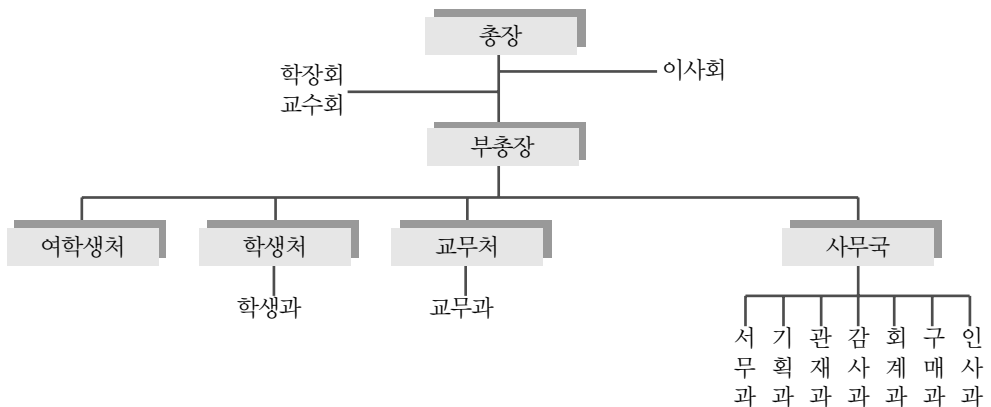
이 사건은 종합대학교로 출발한 서울대학교가 아직 연립대학교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였음을 극명하게 보여 준 것이었다. 또 이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대학 운영 체제의 문제점이 단적으로 표출된 사건이었다. 교수회의 반발로 말미암은 이 사건으로 결국 이사회는 대학 운영에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였고, 점차 학장회가 대학 운영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되었다.

**(3) 본부 및 대학의 행정 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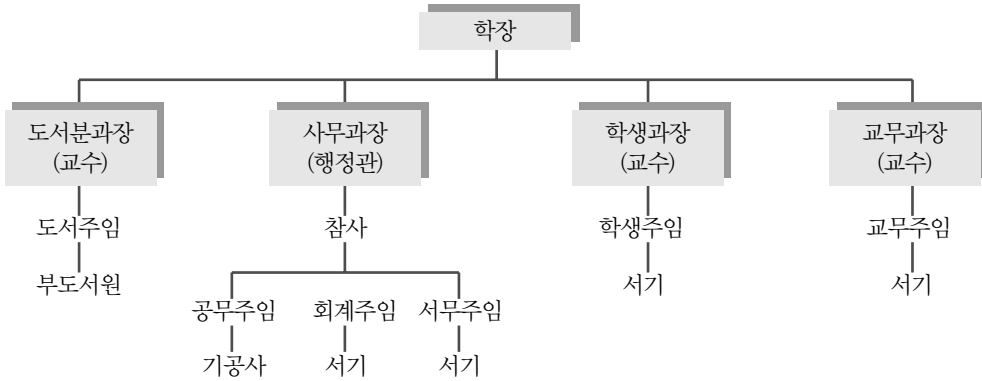
초기의 대학본부 직제는 <표 2-1-1>과 같이 1국·3처·9과로 조직되었다. 초대 교무처장은 미국인 언더우드(Horace N. Underwood)였으며, 초대 학생처장은 미국 시민권을 가진 김성덕이었다. 초대 총장과 함께 교무처장과 학생처장이 모두 미국인 또는 미국 시민권자라는 점은 좌익계 학생들의 집중적인 표적이 되었고, 민족주의적인 학생들도 이러한 사실에 쉽게 공감할 수 없었다. 사무국장은 이계원이었고, 총학생 수 7,295명 중 385명의 여학생을 지도하는 여학생처장에는 손정규가 취임하였다.

한편 <표 2-1-2>, <표 2-1-3>, <표 2-1-4>와 같이 각 단과대학 행정 기구는 각각의 사정에 따라 서로 다른 조직 형태를 이루었고, 이에 따른 행정의 혼란도 없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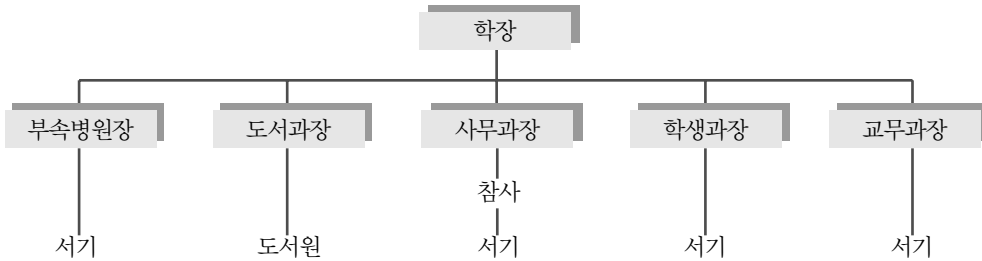
<표 2-1-1> 창립 당시 대학본부 기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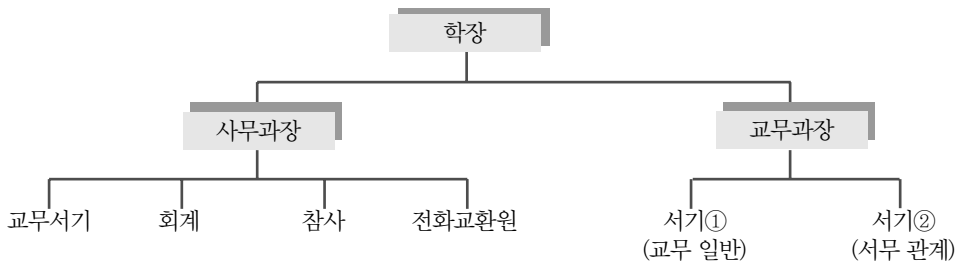
〈표 2-1-2〉 1948년 문리과대학 기구표



〈표 2-1-3〉 1948년 의과대학 기구표



〈표 2-1-4〉 1948년 상과대학 기구표



이러한 점은 서울대학교가 종합대학교로서 통일적인 조직 기구를 갖지 못하고 여전히 연립대학교적 성격을 띠었음을 보여 준다.

### 3) 정부 수립 이후의 대학 운영

#### (1) 정부 수립 직후의 대학 운영

1948년 8월 정부 수립 이후의 대학 운영은 문교부의 통제를 강하게 받았다. 문교부는 우선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강력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하였지만, 그 방향은 오도되었다. 단적인 예로 장리욱 총장의 사퇴를 들 수 있다. 정부 수립 이후에 장리욱 총장은 사표를 제출하라는 정부의 압력을 받고 총장직에서 물러나게 되는데, 대통령과 관계가 소원하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정부 수립 당시, 대학 자치가 어떠한 수준이었나를 잘 보여 준다.

1949년 12월 31일에 법률 제86호로 ‘교육법’이 제정되었다. 이는 헌법 규정에 따라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의 목적과 기본 방침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었다. 교육법 제83조의 “국립, 공립, 사립의 별(別)은 학교명에 관(冠)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서울대학교의 명칭은 ‘국립서울대학교’에서 ‘서울대학교’로 바뀌었다. 또한 제117조에 “국립대학교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의회회를 둔다. 평의회회는 각 단과대학 학장, 교수와 교육에 저명한 인사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 자로써 조직한다”고 하여 평의회회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법시행령이 바로 제정되지 않았던 데다가 이듬해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평의회회는 1955년에 가서야 구성되었다.

#### (2) 전시의 대학 운영

한국전쟁의 발발로 학교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서울대학교는 1950년 말부터 전시연합대학 형태로 학교를 운영하였고, 1951년 2월 18일에 부산으로 이동하였다. 전시연합대학은 1951년 5월에 ‘대학교육에관한전시특별조치령’이 공포되면서 그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었다. 동 조치령 제2조는 “전화로 인하여 정상 수업을 실시할 수 없는 대학의 학생은 그 기간 동안 타 대학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제3조는 “정상적인 수업을 실시할 수 있는 대학은 그 학교 소재지에 소개(疏開)한 타 대학의 학생이 취학을 지망하는 경우 사정이 허하는 한 이를 허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전시연합대학의 운영 경비는 서울 및 부산의 국립대학교 예산에 의존하였으며, 운영은 운영위원회에서 담당하였다. 운영위원회는 각 대학 대표자의 호선에 의한 위원 약간 명과 문교부 장관이 위촉하는 교육 관계자 약간 명으로 조직되었다. 전시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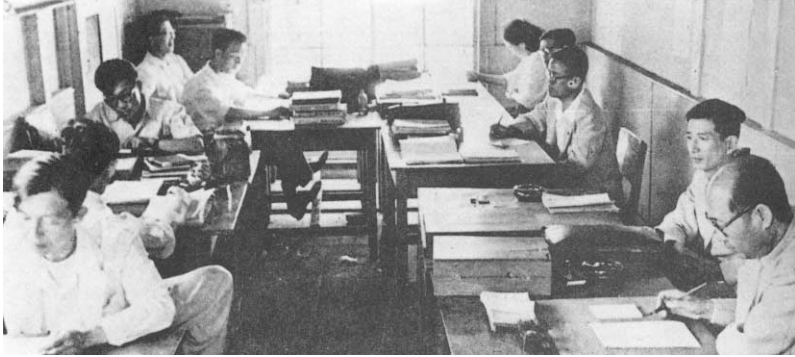


그림 2-1-1 부산 피난 시절의 학생과 교무과

합대학은 부산과 광주, 전주, 대전에 설치되었는데, 서울대학교는 부산전시연합대학에 소속되었다. 부산전시연합대학에는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국학대학교, 한국대학, 국민대학, 신흥대학(현 경희대학교), 단국대학, 세브란스의과대학, 숙명여자대학교, 서울여자의과대학 등 10개 학교가 참여하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각 대학이 독자적으로 수업을 실시할 만한 여건을 갖추게 되자, 문교부는 각 대학과 협의하여 1952년 5월 31일자로 전시연합대학을 해체하였다. 이후 1953년 9월에 서울 캠퍼스로 복귀할 때까지 서울대학교는 부산에서 수업을 실시했고, 1953년 4월에는 서울 거주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진학을 위하여 서울에 분교를 설치하였다.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1952년 6월 전국 총 학장회의에서 서울대학교는 “대학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대학이 당면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어떤 시책이 필요한가를 정리하여 건의한 것으로, 임시적 방책과 항구적 방책으로 나누어 상세한 부분까지 언급하였다. 건의 내용의 중심은 역시 대학 자치에 대한 것이었다. 그 부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대학의 진정한 자치 제도를 확립하여 대학의 권위와 학문 연구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국가 예산 편성에 있어서 국책적 견지에서 전 수입의 일정한 부분을 교육 부분에 배당하는 원칙을 수립하여 교육 행정의 자유성을 확보하게 해야 한다.
3. 교육공무원법을 조속히 실시하여 교수의 신분 보장, 대우 개선에 관한 근본적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4. 국립대학교의 재정의 독립을 인정하여 자유로운 발전을 도모하도록 해야 한다.

이 방안에서 대학 자치를 크게 부각시켰던 것은 문제의 소재를 정확히 짚은 것이었다. 즉 교수의 신분 보장, 대학의 재정적 독립, 자율적 운영 등을 통해 대학의 자치가 확립될 때 대학의 권위와 학문 연구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 측의 대학 자치 요구는 문교부 당국자들에게도 어느 정도 전달되어, 1952년 4월에 발표한 ‘교육법시행령’과 이듬해 4월에 제정 공포한 ‘교육공무원법’, 그리고 이어지는 일련의 법령에 대학 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몇 가지 규정들이 삽입되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의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평의원회에 대한 규정은 이미 1949년 공포된 교육법에서도 나타났지만, 1952년 4월의 교육법시행령 공포로 비로소 구성될 수 있었다. 교육법시행령은 평의원회가 대학 및 부속 기관의 폐지와 설치, 학부 및 학과의 폐지와 설치, 학칙 기타 제 규정의 제정과 변경 등 대학 운영 전반에 걸쳐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민주적 운영을 위한 의결 기관으로서 기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평의원 중 3분의 2 이상을 교내 인사로 구성하도록 규정한 것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평의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인사권만은 평의원회에 부여하지 않았다.

둘째, 교수회의 권위가 강화되었다. ‘교육공무원법’은 교수회를 조교수급 이상으로 구성하고, 총장과 학장을 해당 대학(교) 교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하였고, 조교수급 이상 교직원의 임명과 승진에도 역시 교수회의 동의가 필요하도록 규정하였다. 즉 총장 이하 조교수급까지 교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교수회가 사실상 장악하도록 한 것이다. 이것이 법제화되기까지 당연히 많은 논란이 있었다. 특히 교수회에 인사권을 주는 경우 파벌 조성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수반될 것이라는 우려를 앞세운 반대 의견이 많았다. 물론 정부나 학교 당국도 반대 의견이었고, 정부가 제출한 교육공무원법안에서도 교수회의 인사권만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대학 자치를 위하여 교수회의 인사권 장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결국 위와 같은 교육공무원법을 제정한 것이다.

셋째, 교수의 신분 보장을 법제화했다. 교육공무원법에서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휴직·정직·전직되지 않으며, 현행법을 제외하고는 소속장의 동의 없이 학원 내에서 체포되지 않는다는 ‘불체포 특권’을 규정하였다. 징계 조치도 반드시 교육공무원 특별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였다. 그리고 ‘교육공무원임용법’으로 교수의 자격을 법제상으로 규정한 것도 교수의 신분 보장과 관련한 것이었다. 이처럼 교수의 신분 보장이 법제화한 것은 대학의 자치, 학문의 자유에 직접적인 힘이 되었다.

이와 같이 대학의 자치에 바탕이 될 수 있는 법제적 조치가 취해질 때, 서울대학교 내

에서도 학칙을 새로 정하고 『대학신문』을 창간하는 등 일련의 변화가 있었다. 물론 이전에도 학칙은 있었으나 1953년 4월 공포된 ‘국립학교설치령’ 등에 근거하여 새로이 학칙을 제정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제반 교무 규정과 더불어 학장회, 교수회 등 대학 운영에 대해서도 자세히 규정하였다.

이상과 같이 교육 관계 법령의 제정에 따라 대학 자치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갖추어졌다. 물론 제도적 여건의 구비와 그에 따르는 운영의 실상이 반드시 일치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전란 속에서도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은 이후 대학 자치의 신장을 위해서 커다란 진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 제 2 절 환도 이후 기구 개편과 대학 운영(1953~1975년)

### 1) 국립학교설치령에 따른 기구 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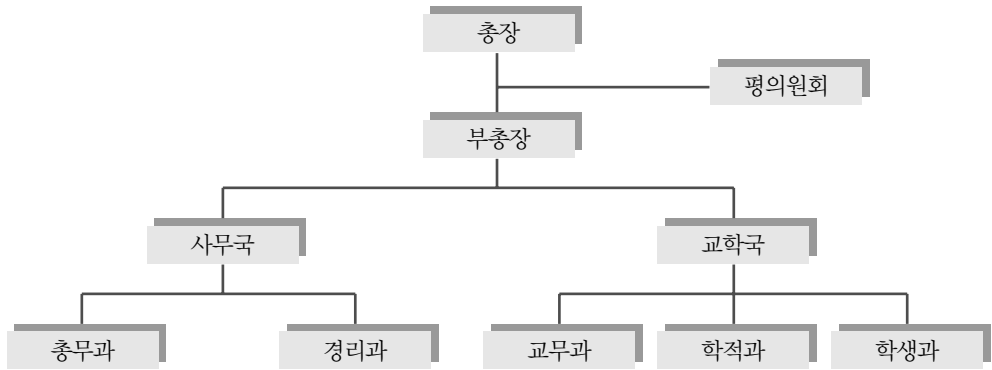
1953년 7월 27일에 휴전 협정이 조인되면서, 9월에 서울 캠퍼스로 복귀한 서울대학교는 이후 전쟁으로 입은 피해를 복구하는 사업을 펼치며 학교를 정상화하는 데 전념하였다.

전쟁이 끝나감에 따라 정부는 각종 교육 관계 법령을 발포하여 교육 기구의 정비를 시도하였다. 그중 중요한 것이 1953년 4월 20일에 공포한 ‘국립학교설치령’이었다. 국립학교설치령의 배경은 전쟁 중 서울대학교 이외에 많은 국립대학교가 설립되어, 이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계 법령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국립학교설치령의 공포로 서울대학교는 ‘서울대학교설치령’이 공포되는 1970년까지 다른 국립대학교와 동일한 취급을 받았다.

국립학교설치령에 의해 종래의 각 단과대학별 독자적인 사무 기구를 통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로써 서울대학교는 종합대학교로서 대학본부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국립학교설치령에 의거한 서울대학교 내부 직제를 살펴보면, 대학본부는 사무국과 교학국으로 크게 나뉘었다. 사무국은 다시 총무과와 경리과로 나뉘었는데, 그중 총무과는 기밀, 관인 관수(官印管守), 인사, 문서, 법령 예규, 통계, 직원의 후생과 다른 국이나

〈표 2-1-5〉 1953년 대학본부 기구표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분장하였고, 경리과는 예산, 결산, 회계, 용도(用度), 영선(營繕)과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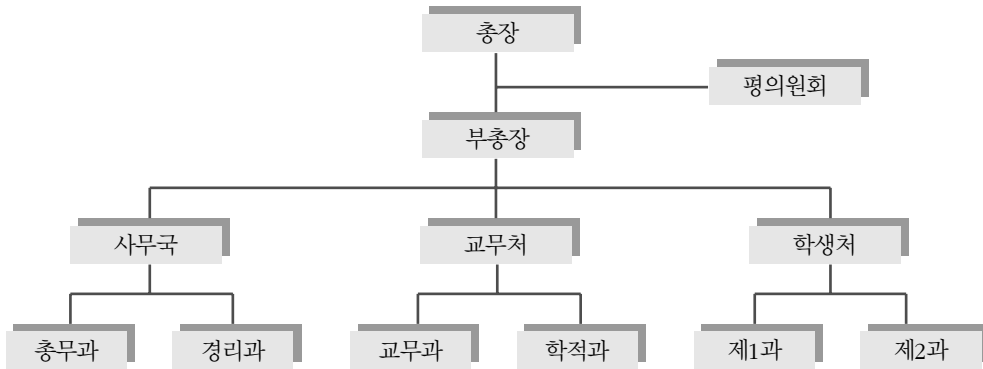
교학국은 교무과, 학적과, 학생과를 두었다. 그중 교무과는 대학, 학부, 학과 또는 강좌의 설치와 폐지, 시험, 학점, 성적, 학위, 학생 정원, 학술 연구와 교학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은 사항을 분장하였고, 학적과는 입학, 졸업, 휴학, 복학, 퇴학, 전학, 전과, 등록, 학적부와 제 증명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였으며, 학생과는 학생 통계, 보건, 후생, 장학금, 간행물, 학비, 동원, 집회행사, 상벌, 훈련, 병사, 학생증, 학도호국단과 졸업생 취직 알선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였다. 그러나 교학국은 국립학교설치령에 의하여 법제상 으로서만 설치된 것으로 실제로는 1956년 9월에 가서야 설치되었다.

그리고 대학원과 각 단과대학에는 서무과, 교무과, 학생과를 두었다. 서무과는 기밀, 인사, 관인 관수, 서무, 회계와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분장하였으며, 교무과는 입학, 졸업, 학적, 강좌 또는 교과 과정, 학술 연구, 수업, 학점, 학위, 기타 교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였고, 학생과는 학생 보건, 후생, 상벌, 장학금, 동원, 집회, 훈련, 병사와 기타 학생 지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였다.

이러한 대학본부 기구 개편으로 인해 개교 초기의 체계에 비하여 업무가 보다 통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개교 초기에는 1국·3처·9과 체제 속에서 행정의 대부분 사무국에 집중하였으나, 1953년의 개편으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담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각 단과대학 행정실이 중요한 실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본부에서는 상대적으로 교학국에 업무가 집중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55년 9월, 서울대학교는 교학국을 교무처와 학생처

〈표 2-1-6〉 1959년 대학본부 기구표



로 분리하는 내용으로 국립학교설치령을 개정할 것을 문교부에 건의하였다. 그러나 이 건의는 보류되었고, 1959년 1월 13일에 가서야 국립학교설치령이 개정되어 서울대학교는 교무처, 학생처, 사무국을 갖추면서 기구를 새롭게 정비하였다.

교무처는 교무과와 학적과를 두었다. 학생처는 제1과와 제2과를 두어, 제1과는 학생 통계, 보건, 후생, 장학금, 간행물, 학비, 학생증, 졸업생 취직 알선과 다른 과에 속하지 않은 사항을, 제2과는 학생 동원, 집회, 행사, 상벌, 훈련, 병사와 학도호국단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였다. 사무국은 종전대로 총무과와 경리과를 두었다. 〈표 2-1-6〉은 1959년 도 대학본부의 조직 편제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대학본부의 기구를 다시 개편한 것은 1965년이였다. 1965년 7월 9일에 국립학교설치령이 개정됨에 따라, 사무국에 관리과와 계획조사과를 신설하였다. 관리과는 재산 관리, 시설 및 영선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였고, 계획조사과는 기본 운영 계획, 조사 분석, 예산, 관리 개선, 통계, 학술 연구 자료 수집 및 대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였다. 개정된 직제 개편의 내용은 1962년에 실시한 기본 운영 계획에 대한 심사 결과를 토대로 서울대학교가 문교부에 건의한 사항, 즉 “기획실과 관재과를 독립시켜 직제화해 줄 것”과 “기획 및 예산 업무 기구를 일원화해 줄 것”을 반영한 것이다.

사무국 직제는 ‘서울대학교 종합10개년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1968년 8월 5일에 다시 개정되어, 기존의 총무과, 계획조사과, 경리과, 관리과 외에 종합시설과가 신설되었다. 종합시설과는 서울대학교 종합10개년계획의 수립, 추진 및 종합 계획과 관계된 시설 공사의 집행·감독과 시설 자재 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였다. 이와 함께 서울대학교 내에서 교무과에 소속된 교수 연구 사업에 관련한 업무를 독립시켜 연구



과를 설치해야 한다는 논의가 많았으나, 연구과 설치는 실현되지 못하였다.

## 2) 평의원회의 설치와 운영

이사회 체제가 평의원회 체제로 개편된 것은 기구 개편과 함께 서울대학교 운영과 관련한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였다.

1949년 12월 31일에 공포된 ‘교육법’ 제117조는 국립대학교 평의원회를 설치할 것을 규정하였고, 1952년 4월 23일 공포된 ‘교육법시행령’은 평의원회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전쟁으로 그 구성이 미루어지다가, 1953년 7월 9일에 비로소 ‘국립대학교평의원회개시의건’이라는 문교부 장관 훈령이 나오고, 1955년 4월 9일에 정식으로 서울대학교 평의원회가 발족하였다.

평의원 수는 22명으로 임기는 2년이였다. 그 구성원은 보직 교수 중에서 부총장 윤일선, 대학원장 이병도, 학생처장 권중휘, 교무처장 이종수, 치과대학 학장 박명진, 수의과대학 학장 오순섭, 미술대학 학장 장발, 농과대학 학장 서리 지영린, 공과대학 학장 황영모, 음악대학 학장 현제명, 약학대학 학장 한귀동 등 11명, 교수 중에서 권오익, 김기석, 김두중, 박동길, 신태환, 이희승 등 6명, 교육에 저명한 교외 인사 중에서 대법관 김두일, 무임소 장관 박현숙, 민의원 이재학, 의사 정구충, 동덕여자대학 학장 조동식 등 5명이였다. 그리고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씩을 두었는데, 의장에는 윤일선 부총장이, 부의장에는 조동식 동덕여자대학 학장이 각각 선출되였다. 평의원회는 대학 또는 부설 기관의 설치와 폐지, 학부 또는 학과의 설치와 폐지, 학칙 기타 제 규정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였다.

그러나 평의원회는 그 제도적 위상에 걸맞은 활동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평의원회는 1955년부터 1959년 사이에 8차례 개최되였다가 그 후 기능이 정지되였다. 그 이유는 평의원회가 대부분 학장들로 구성되어 실제로 학장회의 기능과 중복되였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1971년에 대학 자주화 선언이 나오는 등 대학의 자주 및 자율성에 관한 문제들이 제기되면서 교수협의회와 일부 교수들이 평의원회 부활을 요구하였으며, 8월 23일 교수협의회는 평의원회 부활을 공식적으로 건의하였다. 이에 서울대학교는 교수들을 중심으로 학내외 의견을 대학 행정에 포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평의원회를 부활

하기로 하였다.

부활될 평의원회는 학사 문제를 위시한 대학 행정의 제반 문제를 심의하는 심의 기관의 성격과 그 심의 결과를 총장에 자문하는 자문 기관의 성격을 지녔다. 학내외 여론을 민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교수 대표 10명, 학장 9명, 학외 인사 6명, 교무처장과 학생처장 등 모두 27명으로 구성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내용의 평의원회 부활과 관련하여, 평의원회가 본래의 설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회의적인 의견도 대두하였다. 우선, 새로이 구성되는 평의원회의 기능은 서울대학교의 대학 행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평교수들의 의견을 되도록 광범위하게 받아들여 반영시키는 데 있고, 한편으로는 대학 행정 담당자들에 대해 조언, 비판,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많은 수의 학장들과 교무처장, 학생처장이 평의원회 구성원이 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평의원회가 서울대학교의 모든 단과대학과 대학원을 대표하도록 구성한다는 원칙도 평의원회의 기능을 잘못 이해한 데서 출발한 것이라는 비판이다. 즉 단과대학이나 대학원 간의 협조 또는 이해 조정 기능은 학장회나 교무·학생과장회의에 의하여 충분히 수행될 수 있는 것이며, 평의원회는 어디까지나 소속 대학의 입장을 떠나 서울대학교 교수로서 범대학적인 견지에서 대학 행정에 기여해야 하며, 한 명씩의 대표를 꼭 참여시킨다는 사고방식이야말로 종합대학교로서 서울대학교의 방향 설정과 발전을 저해하는 폐단이라고 지적하였다.

요컨대 첫째, 학장이나 기타 보직자는 평의원회 구성원이 되지 않도록 하여 교수 대표 기관으로서 성격을 뚜렷이 하고, 둘째, 평의원을 각 단과대학이나 대학원 단위로 선출하기보다는 크게 분류된 학문 계열별 교수단에 의하여 선출하여 소속 대학의 이익 대변자가 되지 않도록 하며, 셋째, 이로써 평의원회는 범 서울대학교 견지에서 대학 행정의 기본 문제에 대해 조언, 비판, 평가하는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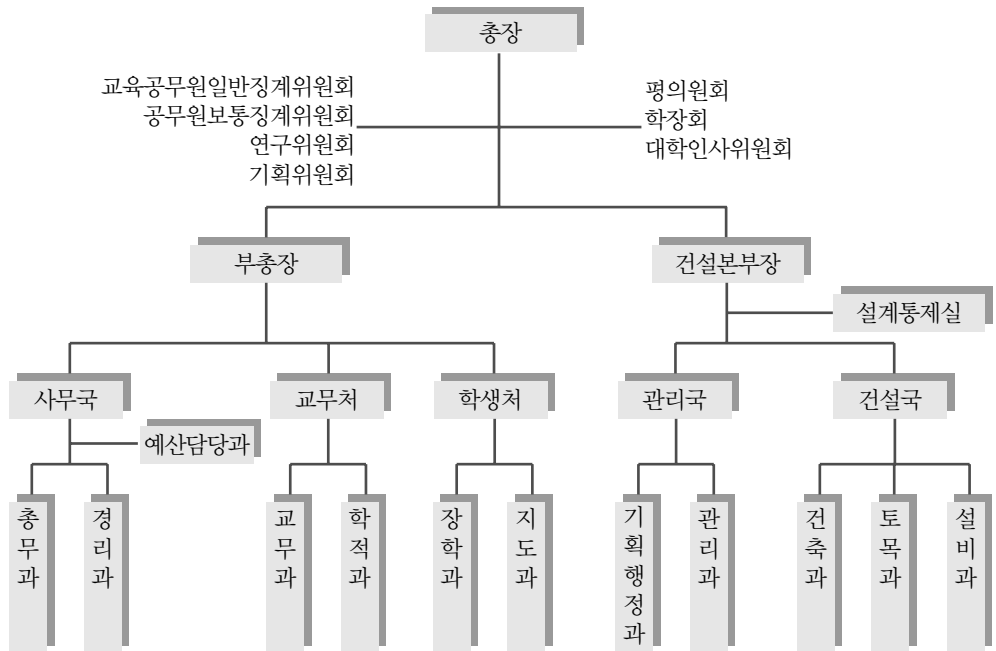
여러 논란을 거쳐 평의원회가 실제 다시 구성된 것은 1974년이였다. 이후 평의원회는 잠시 활동하였으나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1975년의 종합화 이후에는 평의원회가 구성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평의원회 기능의 대부분을 학장회에서 대신하였다. 평의원회는 1988년에 가서야 다시 구성되었다.

### 3) 서울대학교설치령의 제정과 종합화의 준비

1970년 4월 8일, 대통령령 제4870호로 ‘서울대학교설치령’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대학교는 기존의 국립학교설치령에 구속받지 않게 되었다. 이는 서울대학교가 한국에서 차지하는 특수한 위치를 고려한 것이었고, 당시 추진 중이던 ‘서울대학교 종합 10개년계획’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국무총리나 대통령 관할로 하고자 한 서울대학교 측의 기대와는 달리 문교부 장관의 관할 하에 두어져 다른 국립대학교와 법적 지위에서는 크게 다른 점이 없었다.

서울대학교설치령에 따른 기구 개편을 보면, 먼저 종합화 계획의 시행을 위해 총장 산하에 기획위원회와 건설본부를 신설하였다. 기획위원회는 종합화 계획의 시행에 관한 총장 자문 기관으로서, 위원장은 부총장이, 부위원장은 건설본부장이 겸직하였고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였다. 건설본부에는 관리국과 건설국을 두었는데, 관리국에는 기획과와 관리과를, 건설국에는 행정과와 시설과를 두었다. 또한 교무처와 학생처에 부처장을 두고, 학생처에 있던 제1과, 제2과를 폐지하는 대신 장학과와 지도과를 신설

〈표 2-1-7〉 1973년 대학본부 기구표



하였다. 관악 캠퍼스 이전을 담당한 건설본부는 1971년 6월 10일 다시 개편되어, 관리국에는 기획행정과와 관리과를, 건설국에는 건축과, 토목과와 설비과를 두었다. 1972년 7월 24일에는 건설본부에 설계통제실을 신설하여, 종합건설계획의 발전·조정과 기본 설계 및 설계 통제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였다.

이후 1975년부터 실시되는 관악 캠퍼스 이전을 앞두고 1974년 6월에 종합화 및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기획실이 부총장 직속 하에 설치되었다. 이 기획실은 내부 기구로서 종합화 추진에 따른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이에 따른 행정 관리를 전담하였다.

### 제 3 절 종합화와 대학본부의 역할 강화(1975~1987년)

#### 1) 종합화와 대학 관리 조직의 강화

##### (1) 대학 행정의 본부 집중

‘서울대학교 종합10개년계획’을 구체화한 ‘교육연구 및 기구조직계획’은 서울대학교 관리 조직의 편성 원칙으로, 서울대학교는 국립 기관이지만 가능한 한 최대한의 교육 자치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최고 의사 결정 기관으로서 이사회를 설치. 예산·중요 인사 및 교육 정책에 대한 최종 의결체로 둔.
2. 총장은 이사회가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
3. 대학 행정의 본부 집중과 종합화.
4. 행정 요원의 신분 체계를 서울대 공무원으로 일원화하여 인사권을 서울대학교에 귀속.
5. 교육 및 연구 활동, 학생 지도의 학과 위임.
6. 교수의 학교 운영에의 적극 참여 유도를 위한 교수평의회 설치.
7. 부총장을 보좌하는 전문 위원회 설치.
8. 서울대학교 예산 제도의 독립.

이러한 원칙들 중에서 종합화 이후 10년 동안 ‘대학 행정의 본부 집중과 종합화’ 한

가지만 제대로 실현되었을 뿐 나머지 원칙들은 방기되어 버렸다. 이것은 서울대학교의 자치권 약화, 대학 운영의 자율성 부재를 잘 보여 준다.

종합화 이전 서울대학교의 제도 및 운영은 각 대학, 대학원, 연구소 등 하부 기관 중심으로 되어 있었고, 대학본부는 이들 여러 기구의 연합체적 성격을 갖고 있었다. 단적인 예로 학칙의 경우 대학, 대학원, 전문 대학원 등에 각각 개별적인 학칙이 있어 모두 8개의 학칙이 존재하였다. 1975년 2월에 '서울대학교설치령'을 개정함에 따라 8개의 학칙은 폐지되고 '서울대학교학칙'으로 단일화하였다. 이때의 학칙 개정은 총칙 제1조(목적)에서부터 제108조에 이르기까지 전면에서 걸쳐 행해진 것이었다. 이에 따라 과거 단과 대학별로 이루어지던 학사 행정 운영은 종합화 이후 대학본부를 중심으로 학과 단위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학사과정과 석사과정 간의 교류, 단과대학 간의 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졌다.

학사 행정의 본부 집중 운영을 위해 대학의 관리 기구가 개편되었다. 이때 관리 기구 편성의 원칙은 다음 네 가지였다.

첫째, 관리 기구는 교육 활동을 위한 서비스와 감독 기능을 하는 기구인 바, 같은 질의 서비스와 감독을 위해서는 규모가 교육 기구에 비하여 적을수록 능률적인 조직이므로 가능한 확대하지 않기로 한다.

둘째, 관리 기구의 확대는 장차 그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실현시키기로 하고, 현시점에서는 현행의 잠정적인 기구로 운영하여 나가도록 하며, 따라서 부총장직도 증설하지 않기로 한다.

셋째, 사무의 본부 집중과 통합으로 인한 사무량의 폭주는 이를 현재와 같은 소과주의(小課主義, 과당 평균 10~15인)로부터 대과주의(大課主義, 과당 평균 30~40인)로 전환함으로써 흡수시킨다.

넷째, 관악 캠퍼스의 방대하고 복잡한 기술을 요하는 시설의 관리 유지를 위하여 시설국을 신설한다.

이와 같은 개편 원칙에 따라 서울대학교 관리 조직의 기구 개편이 이루어졌다. 서울대학교의 관리 및 건설 기구 편제는 총장을 최고 책임자로 하고, 부총장, 건설본부장을 각각 중심으로 하여 편성되었다. 부총장 산하의 기구는 사무국(총무과, 경리과, 조달과, 기획예산담당관), 교무처(교무과, 학적과, 수업과), 학생처(학생과, 후생과, 상담지도관), 시설관리국(관리과, 운영과)으로 편성되었으며, 건설본부장 산하 기구로는 건설국

(건설행정과, 건축과, 토목과, 설비과)과 건설통제실을 두었다.

사무국에는 조달과가 신설되어 물품의 구매·조달·보관·처분·수리 및 재물 조사에 관한 사항들을 분장하였고, 예산담당관은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교무처에는 수업과가 신설되어 수강신청, 교과서 관리, 수업 시간표 및 수업 관리, 교외 교육, 실습, 학점, 성적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였다. 학생처에는 지도과와 장학과가 학생과, 후생과, 상담지도관으로 분리, 개편되었다. 학생과는 학생의 병사, 체육, 동원, 훈련, 통학, 신분 및 학생 회관 관리, 기타 학생처 내 다른 과 및 상담지도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은 사항을 분장하였고, 후생과는 학생 보건, 후생, 장학금 급여 및 학생 기숙사 기타 학생 복지 시설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였고, 상담지도관은 학생 행사, 자치 기구 운영, 과외활동, 개별, 집단지도와 상담, 취업 지도, 상벌 및 학생생활연구소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였다.

종합화 이전 건설본부 소속이었던 관리국은 부총장 소속으로 이관되어 시설관리국으로 개편되는 동시에, 그 밑에 관리과가 소속되고 운영과가 신설되었다. 그리고 건설본부 소속의 설계통제실은 건설통제실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관리국의 기획행정과는 건설국의 건설행정과로 이관, 개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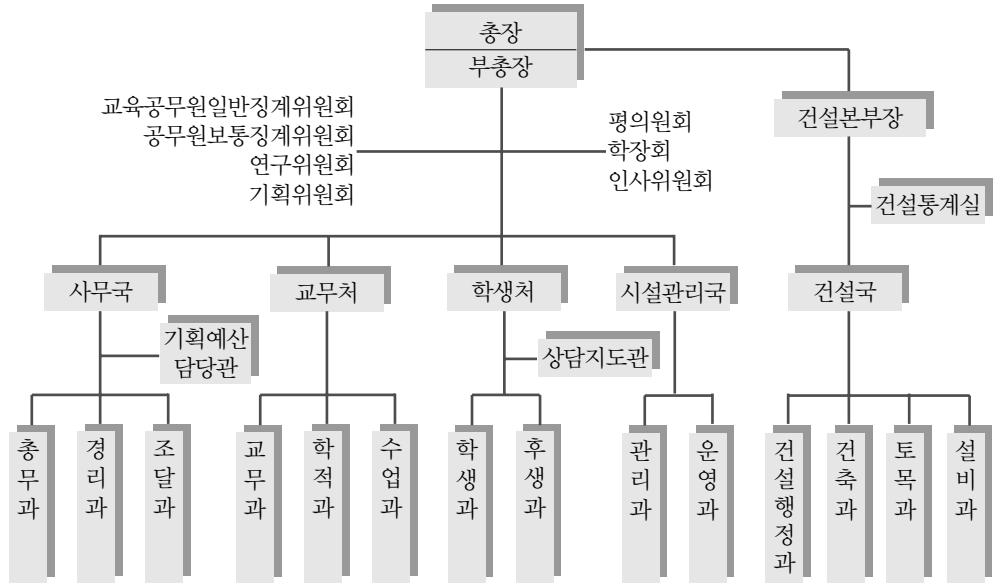
한편 건설본부는 관악 캠퍼스 건설 공사가 마무리되고 '서울대학교시설확충특별회계법'의 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학칙 개정에 의해 1977년 7월 21일에 폐지되었으며, 이에 따라 건설본부 산하 기구도 아울러 폐지되었다. 또한 같은 날자로 조달과가 관재과로 개편되어 국유 재산의 취득, 보존 및 처분, 물품 조달 및 처분, 차관 사업 계획의 작성 업무, 대학 시설 현황의 작성, 주택 관리 등의 업무를 관장하였다.

1975년의 서울대학교설치령 개정에 따라 대학본부뿐만 아니라 각 단과대학 조직도 개편되었다. 각 단과대학에 교무 담당 학장보와 학생 담당 학장보를 신설하고, 각 단과대학의 서무과, 학생과, 교무과를 폐지하여 단과대학별로 운영되던 학사 행정 사무를 본부에서 총괄토록 하였다. 그 대신 단과대학은 교무행정실, 학생행정실, 서무과를 두어 단과대학 차원의 행정 사무를 처리하게 하였다.

교무 담당 학장보는 입학, 졸업, 학적, 강좌 또는 교과 과정, 학술 연구, 수업, 학점, 기타 교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학장을 보좌하며, 학생 담당 학장보는 학생 보건, 후생, 상벌, 장학, 동원, 집회, 훈련, 병사와 기타 학생 지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학장을 보좌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학장의 유고 시에는 교무 담당 학장보가 대리하도록 하였다.

부속 시설의 구성도 종합화 계획에 따라 변화되었다. 전자계산소, 교육매체제작소,

〈표 2-1-8〉 1976년 대학본부 기구표



실험동물사육장 등을 신설하는 한편, 종전 상과대학 부설 경제연구소를 본부 직속 연구소로 지위를 격상하였다. 신문대학원 부설 신문연구소도 신문대학원의 폐지에 따라 사회과학대학 부설 연구소로 이관하였다. 또한 공과대학에 생산기술연구소, 의과대학에 의학교육연수원, 수의과대학에 부속동물병원, 사범대학에 과학교육연구소를 신설하였다.

## (2) 각종 위원회의 설치와 활동

종합화에 따른 대학 행정의 본부 집중으로 인해 본부 소속 각종 위원회를 신설하거나 또는 그 기능을 강화하였다. 1975년 7월 25일에 전문 개정된 학칙에 따르면 본부 소속 위원회로는 기획위원회, 대학원위원회, 기초과정위원회, 교과과정위원회, 연구위원회 등이 있었다. 이들 각 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획위원회는 서울대학교의 교육 및 시설 종합화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에 관하여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이 위원회는 부총장이 위원장, 건설본부장이 부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각 처장, 국장과 대학원장, 학장, 교수와 기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 자로 21명 이내로 구성되었다. 기획위원회는 ① 서울대학교의 중·장기 교육 계획에 관한 사항, ② 서울대학교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③ 서울대학교의 중·장기 시설 계획에 관한 사항, ④ 기타 계획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

의하였다. '서울대학교 종합10개년계획'이 끝남에 따라 기획위원회는 1977년 3월 21일에 전면 개편되었다. 그동안 종합화 계획을 추진하였던 교육연구 및 기구조직분과위원회는 해체되었고, 산하에 학사분과위원회와 시설분과위원회를 두었다. 이 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서울대학교의 발전 계획을 입안하는 것으로 '서울대학교 발전10개년계획'을 입안하여 제출하였다.

대학원위원회는 위원장인 대학원장 및 서울대학교 교수 중에서 대학원과정 교육에 관하여 특별한 식견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학문 각 분야별로 총장이 임명한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하였다. 대학원위원회는 ① 석·박사학위 과정의 설치와 폐지 및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② 학위 심사의 제도와 절차에 관한 사항, ③ 대학원과정의 입학·수료 및 학위 수여의 제도에 관한 사항, ④ 박사학위와 명예 박사 학위에 관한 의결, ⑤ 박사학위논문의 심사와 심사 위원회 선정 제도에 관한 사항 ⑥ 대학원과정의 운영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⑦ 기타 대학원과정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등을 심의하였다.

한편 교양과정부의 폐지에 따라 학사과정의 기초 과정 학생들에 대한 교육 방침을 심의하기 위해 기초과정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이는 1973년 10월에 설치한 기초과정연구위원회를 이은 것으로 보인다. 기초과정위원회는 위원장인 교무처장과 부위원장인 교무부처장, 그리고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의 교무 담당 학장보와 기타 대학의 교무 담당 학장보 4인으로 구성하였다. 이 위원회에서는 ① 학사과정 입학시험에서의 계열 분류 방법에 관한 사항, ② 전공학과 선정 절차와 기준에 관한 사항, ③ 기초 과정 교양 교육을 위한 교과 과정에 관한 사항, ④ 기타 기초 과정 교양 교육을 위하여 특히 중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였다.

또한 1975년 9월 24일에 각 단과대학 및 전문 대학원의 교과 과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연구하기 위해 교과과정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교과 과정과 관련한 위원회는 이전에도 몇 차례 설치·운영된 적이 있었다. 1953년에 교과과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종래의 교과 과정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교육 방향에 부합되는 교과 과정을 마련하였고, 1960년 대에도 교과과정개편위원회(1962년)와 교과과정연구위원회(1964년)가 설치되어 활동하였다. 종합화 이후 1975년에 설치된 교과과정위원회는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되고, 교무부처장 및 각 학문 계열을 대표하는 교수로 구성하였는데, 인문·사회·이공·생농·의학·예능 등 6개 분과를 설치하였다. 이 위원회는 실험 대학 실시로 졸업에 필요한 이수 학점이 종래의 160학점에서 140학점으로 축소됨에 따라 전 대학에 걸쳐 유사



과목이나 중복 과목을 폐지 또는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또 부전공제 실시에 따른 새로운 교과 과정 설정, 부전공 대상자 선정 문제, 부전공제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시행 지침을 마련하였다.

연구위원회는 서울대학교의 연구 사업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할 주체로서 1953년 11월에 발족하였고, 이어 1954년 7월, '서울대학교연구위원회규정'을 만들면서 대학원 소속으로 제도화되었다. 연구위원회는 대학원장이 위원장, 교무처장이 부위원장을 겸임하였고, 각 대학에서 제출된 연구 테마의 심사 결정 및 연구비 배정에 관한 사항과 논문집 기타 학술 보고서 간행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였다. 1957년 2월에는 학술 서적 출판을 관장해 오던 출판위원회를 통합하여 기능을 확충하였다. 이후 1975년 종합화와 함께 학칙이 개정됨에 따라 연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도 변화하였다. 연구위원회는 본부 소속 위원회가 되었고, 부총장(위원장), 대학원장, 교무처장(이상 당연직)과 총장이 임명한 약간 명의 교수로 구성되었다. 이 위원회에서는 ① 학술 연구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에 관한 사항, ② 연구 사업비 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③ 연구 제목, 연구자의 선정과 연구비 배정에 관한 사항, ④ 연구 결과에 대한 분석 평가에 관한 사항, ⑤ 도서 출판, 학술 보고서, 논문집에 관한 사항, ⑥ 서울대학교 내 각급 연구소 간 상호 조정에 관한 사항, ⑦ 기타 학술 연구 및 도서 출판에 관한 중요 사항과 총장이 위촉하는 사항을 심의하였다.

## 2) 1980년 대학 자율화의 시도와 기구 변화

### (1) 대학 자율화의 시도

1979년의 10·26 사태로 학원의 자율성을 엄격히 제한하였던 유신체제가 막을 내리자 학내에서는 대학본부, 교수, 학생의 각 차원에서 대학 자율화를 위한 노력이 나타났다. 대학본부에서는 학사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대학개혁구상'을 마련하였고, 교수들은 교수협의회를 개편하고 대학 자율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학생들은 학생회부활추진위원회를 통해 학생회를 결성하였다. 이와 더불어 서울대학교는 유신체제 하에서 학원의 자율성을 제약하였던 여러 학칙 규정의 개정안을 만들어 문교부에 인가를 요구하였다.

학사조정위원회는 1979년 11월 22일에 열린 학장회에서 고병익 총장이 제의하여 구

성된 것으로, 10·26 사태 이후 서울대학교에서 최초로 나온 공식적인 반응이었다. 이는 학내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학생과 교수들의 논의가 활발해지고, 정부 측도 ‘학원 내 관심사의 전진적 개선’, ‘긴급 조치 관련 학생 복교 방침’을 발표하자, “대학 본연의 자세를 재정립하고 검토하기 위한 총장의 비상설 자문 기관”으로 발족한 것이었다. 교내의 의사를 집약하고 학생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통로라는 기능도 있었다. 학사조정위원회는 기능, 운영, 위원 인선 등에 대한 토의를 거쳐 12월 4일에 설치되었는데, 부총장 등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정치적 상황이 유동적이었기 때문에 학사조정위원회의 활동은 비공개적이었고 다만 내부에 학생 지도, 학내 언론, 학생 활동, 교권 확립 등 4개의 분과 위원회를 두어 각 분과위원회가 학생 및 교수와 비공개 청문회를 가지면서 학내 여론을 정리하려고 하였다. 또한 학사조정위원회에서는 당면한 대학 개혁에 대한 논의와 아울러 전반적인 대학 개혁 방안도 함께 논의하였다. 지도 휴학제, 분담 지도 교수제, 학생 자치 기구의 설치 문제, 교수회의 권한 강화 문제 등에 대한 제반 논의가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마련한 대학개혁구상을 1980년 3월에 발표하였다. 대학개혁구상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2장 제3절에서 다루었다. 학사조정위원회에서 마련한 대학개혁구상은 학원의 자율성을 제약하던 제반 학칙 규정을 개정하려는 노력으로 나타났다.

서울대학교는 대학 민주화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관련 학칙 조문을 정비·개정하여 문교부에 학칙 개정 인가를 신청하였다. 가장 우선적으로 취해진 것은 상담지도관의 폐지였다. 상담지도관실은 학생처에 소속되어 학생 행사, 학도호국단 운영, 과외 활동, 개별 및 집단 지도와 상담, 상벌 및 학생생활연구소에 관한 사항, 학생 신상 및 동태 파악 등을 관장하였지만, 실제 업무는 주로 학생 시위에 대한 사전 예방 조치나 학생 세력의 동태 감시, 시위 학생에 대한 처벌 등 학생 시위에 관한 사항을 전담하는 기구였다. 따라서 학칙 개정 요구를 통해 상담지도관을 폐지하고, 그 대신 장학담당관을 두어 장학금 급여, 취업 지도, 해외 유학 및 여행, 학생 저축 및 학생 금고, 기타 장학에 관한 사항을 분장토록 하였다. 이는 1980년 4월 17일의 서울대학교설치령 개정에 의해 현실화되었다.

또한 서울대학교는 상담지도관 폐지 이외에 비합리적인 제반 학칙에 대한 개정안을 작성하여, 1980년 2월 14일 학장회 심의를 거쳐 문교부에 인가를 신청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수회의 소집 요건에 '전임 교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라는 항목을 추가하여 교수회의 권한 강화.
2. 교수회의 심의 사항 중 인사 위원 선출권을 추가.
3. 교수회의 결정에 따라 학과교수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
4. 도서관 규정을 개정하여 도서관을 독립된 기관으로 설치.
5. 학칙 상 규정되었으나 실제 활동하지 않은 평의원회 규정을 삭제.
6. 학도호국단 설치 조항을 삭제하고, 학생 자치 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따라 호국단비와 호국단조직 승인 조항을 삭제.
7. 학생에 대한 분담 지도 교수제를 폐지.
8. 학생의 금지 활동 규정인 "학생은 학내외를 막론하고,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또는 기타 정치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집단적 행위, 성토, 시위, 농성, 등교 거부, 마이크 사용 등으로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여하한 행위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학생은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할 수 없다", "학생은 교육 및 연구 수행과 학내 질서 유지에 배치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로 변경.
9. 학생 단체 또는 학생 활동의 사전 승인 조항을 삭제.
10. 지도 휴학제를 폐지, 즉 종전의 휴학 조항에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장은 학(원)장의 신청에 의해 휴학을 명할 수 있다"는 지도 휴학제 규정을 '질병' 으로만 한정.
11. 간행물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여 학내 간행물의 사전 심의제를 폐지.
12. 학생 징계는 모두 교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여, 종전 교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학장의 요청으로 총장이 독자적으로 징계할 수 있는 학칙 조항을 삭제.

이상과 같은 서울대학교의 학칙 개정 요구는 5·17 쿠데타로 인한 대학 휴교령 때문에 보류되었다. 개정안은 대부분 인가되지 않았고, 일부 개정된 조항도 그다지 자율화 요구를 포함한 것이 아니어서 결국 다시 유신체제하의 학칙으로 환원되어 버렸다. 결국 5·17 쿠데타로 신 군부가 정치권력을 장악하면서 교육 개혁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학원 자율화 시도는 다시 학내의 차원을 벗어났고, 대한 운영의 자율성을 회복하고자 했던 여러 노력들은 무산되고 말았다.

1980년 7월 25일에 문교부에서는 대학의 안정을 해치는 것으로 지목된 학내 시위를 방지하려는 목표에서 '대학학사운영정상화방안' 을 각 대학에 시달하였다. 문교부는 "각종 학내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의 불만 요인을 제거하여 학원 면학 분위기를 정상화함으로써 대학 교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한다는 표면적인 이유를 내세웠으나, 강조점은

‘수업의 충실화와 학내 질서의 확립’이었다. 즉 대학에서 수업을 철저히 진행시키고 수업을 방해하거나 불법적인 학생 활동에 참여하는 등의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었다. 이때 제시된 학내 질서 재확립 방안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수업 방해 행위 및 거부 행위를 엄단할 것.
- 어떠한 이유로도 수업의 신성불가침성의 침해를 용납하지 말 것.
- 수업 방해자 및 수업 거부자는 학원으로부터 추방할 것.
- 불법 조직 활동 금지(불법적 학내 조직과 씨클 활동 불허, 위반자는 학사 징계 등 강력히 조치).
- 상벌 질서의 확립(선행에 대한 표창 확대 및 발굴, 비행에 대한 엄중 문책).
- 학생 복지 시설의 확충 및 운영 개선(도서관 시설 및 장서를 기준 이상 확보 장려, 학생 이용에 편리 제공, 질서 확립 캠페인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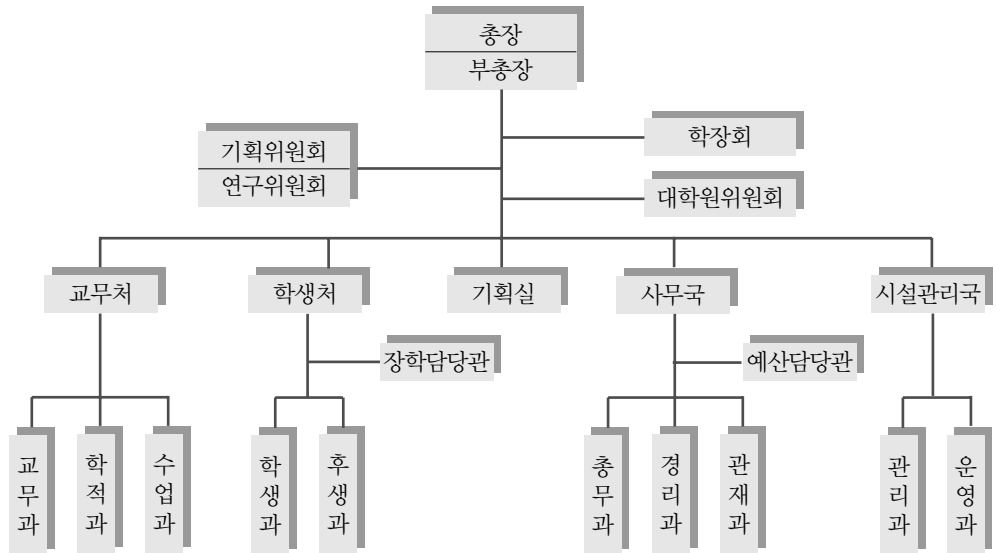
여기서 제시된 방안은 1980년 이후 학교 운영의 주요 지침으로 작용하였다. 이제 대학은 아주 작은 학사 관리 행정까지도 행정 기관의 통제 하에 놓이게 되었다. 대학 행정의 전문성과 능률성은 행정이 본부에 집중됨에 따라 행정 관료에게 맡겨졌고, 이들은 상부 기관의 지시에 따라 획일적으로 움직여 대학 행정의 관료화, 경직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났다.

## (2) 관리 조직의 변화

1985년 7월 5일의 서울대학교설치령 개정으로 기획실이 법정 기구로 승격되었다. 기획실은 1966년에 기획처로 9개월 동안 설치되었다가 폐지되었으며, 1974년에는 부총장 산하 기구로 다시 설치되었으나 법정 기구는 아니었다. 1974년에 설치된 기획실은 관악 캠퍼스 이전을 앞두고 이를 실행할 기구로 설치된 것이다. 이때는 종합화 추진에 따른 정책 및 기획을 조종하고 이에 부수하는 행정 관리를 전담하였다. 이러한 기획 업무는 관악 캠퍼스로 이전한 이후 유명무실화되었고 기획위원회가 그 기능을 담당하였다. 기획실 업무는 1983년에 사무국 내 기획예산담당관 산하의 기획계로 부활되었다가, 1984년 3월에 기획실이 다시 독립 설치되었고, 1985년 9월에 법정 기구로 승격되었다.

기획실은 대학 발전 계획 및 학사 운영에 관한 종합 계획의 수립, 기획위원회 운영, 대학 운영 평가, 국제 학술 교류, 학술 홍보, 행정 전산화에 대한 기본 계획 수립, 각종 교육 통계 작성 및 관리, 기타 대학 발전을 위한 기획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였다. 기획

〈표 2-1-9〉 1985년 대학본부 기구표



실 설치로 인해 서울대학교 발전 계획의 입안과 추진은 지속성을 가지고 행해질 수 있었다. 법정화 이후 기획실에서는 1985년 말부터 ‘서울대학교 장기발전계획포럼’을 설치하여 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입안하였다. 한편 기획실 설치에 따라 종전의 기획예산담당관은 예산담당관으로 명칭을 바꾸고 기획 업무는 기획실로 이관하였다.

#### 제 4 절 대학 자율화와 운영의 효율성 추구(1987~2006년)

##### 1) 자율화와 효율성의 확대에 따른 기구 개편

###### (1) 연구처의 신설과 기획실의 강화

1989년 10월 28일 ‘서울대학교설치령’을 개정하여 기구를 개편하였다. 먼저 서울대학교의 학술 연구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총장 밑에 연구처를 신설하고, 연구처에 연구진흥과 및 연구지원과를 두었다. 연구진흥과는 학술회의 지원, 국제 학술 교류, 학술지 발간, 연구 결과에 대한 평가·관리, 연구비 지급, 기타 처내 다른 과의 주

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분장하였고, 연구지원과는 중앙교육연구전산원과 실험동물사육장에 대한 지원, 부속 연구소(어학연구소 및 학생생활연구소 제외) 지원, 연구 기기 관리, 교수 연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였다. 또한 기획실이 강화되었는데, 실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실장을 두고 기획담당관을 신설하였다.

## (2) '서울대학교법' 제정의 추진

'서울대학교법' 제정은 1987년에 입안된 '서울대학교 발전장기계획'(1987~2001년)의 일환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즉 서울대학교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교육부 장관 직속으로 되어 있는 행정 체계를 국무총리 직속으로 격상하고 학교 재정을 독립시키자는 것이었다. 아울러 이를 통해 학교 발전의 자율성을 확보하여 21세기 초반에는 세계 유수의 대학 대열에 서울대학교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였다.

1989년 7월 12일에 서울대학교를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한 특수 법인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서울대학교법제정연구소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 소위원회는 서울대학교법을 제정할 경우의 장단점과 법체계 구성, 법 내용 등을 연구하는 임무를 맡았다. 그러나 서울대학교 발전장기계획의 다른 시급한 문제를 처리하는 사이에 서울대학교법안에 관한 사항은 거의 논의되지 못하였다. 서울대학교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한 것은 이수성 총장이 취임한 1995년부터였다.

1995년 4월 12일에 서울대학교발전위원회가 구성되어 대학 발전 문제 전반에 걸친 총장 자문 기구로서 활동하였는데, 그 산하 분과 위원회로 서울대학교법제정연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 위원회에서 1996년 2월 28일에 「서울대학교법 제정에 관한 연구」라는 보고서를 간행하여 가칭 '서울대학교법(안)'을 완성하였는데, 이 법안은 서울대학교설치법과 설치법시행령, 특별회계법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설치법은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서 서울대학교의 특별한 위치를 선언하는 바탕이 되는 법안이며, 시행령은 이 법안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감독 기관 변경, 학교 조직 개편 등을 규정하였다. 특별회계법은 서울대학교가 그동안 일반 회계에 묶여 일일이 재정경제원의 감독을 받던 것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1996년 4월 12일, 13일에 여론 수렴을 위해 '서울대학교법(안)에 관한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이 공청회에서 서울대학교법이 일률적인 교육법에서 벗어나 자율성을 확보하고 연구 중심 대학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찬성 논리와, 전체 교육 현실의 어려움을 외면한 특권적 발상이라는 반대 논리의 대립이 표출되었다. 이렇게 의견이 분

분한 가운데 법안의 수정으로 논의가 기울었다. 1996년 5월 3일에 열린 전국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에서 선우중호 총장은 서울대학교법을 단독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국립대법이 모든 국·공립대에 동일한 수준의 연구와 교육 기능을 맡겨야 한다는 취지라면 반대”라고 하였다.

이후 각 단과대학에서 서울대학교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학내 여론을 수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본부는 1997년 8월 20일에 서울대학교법 수정안을 발표하였다. 수정안의 주요한 내용은 대학 내 자율적 학칙 제정, 평의원회의 위상 강화, 학사 운영의 실질적인 자율성 확보 등이었다. 수정안에 대해 교수협의회는 10월 7일, 대학의 고유 기능 강조, 평의원회에 교수 참여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교수협의회안을 본부에 제출하였고, 11월 14일에는 서울대학교법 관련 설문 조사 결과를 총장에게 전달하였다. 응답한 교수들은 대체로 교수회의를 의결 기구로 인정하고 기초공통 교육 기관을 두는 조항을 폐지하는 등의 의견을 제시한 교수협의회안에 동의하였다.

서울대학교법 제정을 추진하였던 서울대학교는, 대학의 교무·연구·교육 자율성을 확보하고, 특별회계법을 통해 자율적 재정의 폭을 넓혀, 서울대학교를 연구 중심 대학으로 개혁하려는 지향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다른 대학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즉 다른 국·공립대와 더불어 대학 자율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국립대학교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었다. 또 기초 학문 분야에 대한 지원이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 사회적으로 서울대학교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것도 이 법안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결국 서울대학교법 제정은 1987년부터 서울대학교 발전장기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여 1995~1997년에 본격적으로 논의되었으나, 학내외의 반발로 법제화에 실패하였다.

### (3) 관계 법령의 정비와 행정 조직의 개편

서울대학교법 제정 노력이 좌절된 후, 서울대학교는 대신 서울대학교법의 기본 정신을 서울대학교설치령에 포함시켜 대학 발전에 우선적으로 중요한 사항을 법령화하고자 추진하였다. 1998년의 ‘서울대학교 장기발전구상’에서 대학 행정 조직의 개편을 제시하였다. 여기서는 행정 조직을 분권화하고 경량화하며, 기능별 조직에서 대상별 조직으로 바꾸고, 탄력적이고 유연한 조직이 되게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였다. 예산 업무를 기획실로 이관하고, 입학 관리 업무를 학생처로 이관하고, 복지 환경 관련 업무와 시설관리국 업무를 사무국으로 이전·통합하며, 교무처와 연구처를 통합하여 교수 활동

과 관련한 행정 지원을 일원화하고, 복수의 부총장 직제를 도입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교육부가 1998년 9월 28일에 입법 예고한 서울대학교설치령 개정안은 부처·실장제와 시설관리국을 폐지하는 한편, 교무처·학생처·연구처·기획실 및 사무국을 교무연구처·학생교육처·기획처 및 사무국으로 축소·개편하고 세부 사항은 학칙에 위임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대학교는 10월과 11월에 걸쳐 정부 측에 학교의 입장을 건의하였다. 그 내용은 ① 종합 연구 대학으로의 발전 목표 추가, ② 학술정보원, 민족문화원 및 전국 단위 연구소 관련 조항 신설, 평의원회 관련 조항 신설, ③ 국가의 지원 및 감독 조항 신설, 부처장제, 시설심의관, 국제교류실장 및 대학별로 1~2명의 부학장 설치, ④ 예산 편성권의 기획실 이전 등이었다. 그러나 교육부의 방침은 사무국에서 예산의 편성과 집행 및 자체 감사를 담당하고 조직 축소를 위해 부처장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외에 단과대학 부학장 및 사무국장의 시설과 기술 업무 보좌를 위해 시설심의관을 두는 문제, 평의원회나 학술정보원 설치 문제 등에 대해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였다. 이런 가운데 1998년 12월에 국립대학교 경영 진단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개정을 추진한다는 의견에 따라 개정은 유보되었다.

결국 서울대학교설치령은 2001년 3월 2일에 개정되었다. 서울대학교의 행정 조직을 감축하고 하부 조직 및 부속 시설을 설치하고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대학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선하고 책임 행정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단과대학 및 대학원을 일정한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단과대학 및 대학원에 학과 및 학부를 둘 수 있도록 함.
- 지원 시설·연구 시설 및 부속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연구 시설과 부속 시설에 대하여는 매 2년마다 운영 실적을 평가하여 존속 또는 폐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 처·실 및 국을 일정한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단과대학·대학원·학과 및 학부의 설치 등 조직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학교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단과대학 및 대학원에 15개의 범위 안에서 행정실을 두되, 2개 이상의 단과대학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통합하여 둘 수 있도록 함.

이에 따라 종래의 행정 체계에 약간의 변화가 생겼다. 즉 처·실·국의 총수를 사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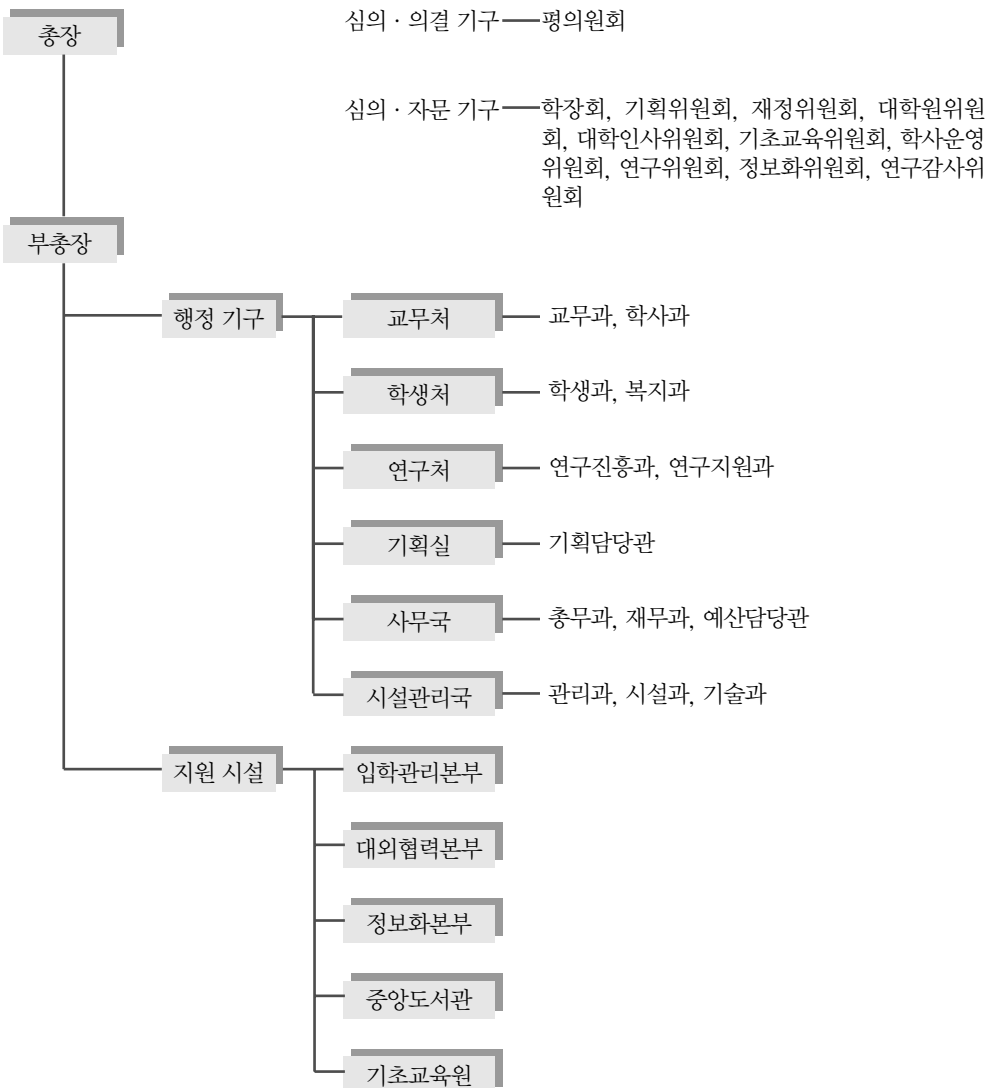
국을 포함하여 6개로 규정하고, 입학관리본부, 대외협력본부, 학술정보원, 중앙도서관을 지원 시설로 설치하였다. 2001년 초에 입시관리센터가 입학처로, 국제교류센터가 대외교류처로 각각 독립, 승격되었으나, 이 개정안에서 본부의 행정 조직 중 처·실·국의 총수를 6개로 제한함에 따라, 입학처와 대외교류처는 각각 입학관리본부와 대외협력본부로 전환하였다. 동시에 기초교육위원회, 학사운영위원회, 재정위원회, 정보화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되었다. 그리고 과 및 담당관이 16개로, 대학 행정실이 15개로 조정됨에 따라 연구부처장, 기획부실장, 그리고 연구진흥과 등이 폐지되었다. 그러나 이후 과중한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2003년 3월 25일에 연구부처장, 기획부실장 직위를 다시 설치하였다. 또한 대학원장 위상을 강화해 부총장이 담당해 오던 대외 교류 등의 업무를 분담하게 했다. 이는 그동안 부총장의 업무가 과중하여 복수 부총장제를 건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다.

한편 개정안은 “서울대학교에 사무국을 포함하여 6개의 범위 안에서 처·실 및 국을 두”도록 규정하여 처·실·국의 총수만을 제한하고 조직의 역할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사무국에 관해서는 여전히 법령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처장·실장 및 국장의 분장 사무는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면서도 사무국장의 분장 사무는 법령에 규정해 놓았다. 사무국장의 분장 사무는 “보안, 관인 관리, 직원 인사, 급여, 문서 관리, 법무, 자체 감사,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 회계 및 결산, 국유 재산 및 물품 관리, 직장 예비군 및 민방위 대원 관리, 비상 기획, 그 밖에 총장이 정하는 사항”이었다. 즉 교육인적자원부 공무원이 국장을 맡고 있는 사무국은 예산 편성권과 집행권, 자체 감사권은 물론 직원 인사권 등 대학 운영권의 상당 부분을 지니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가 설치령에 사무국의 권한을 규정해 놓은 것은 대학이 사무국의 권한에 손댈 수 없도록 해 교육부의 영향력을 존속시키려는 것”(『대학신문』 2001년 10월 8일자)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하였다. 서울대학교설치령에서 사무국의 분장 사무를 규정하고 있어 학교가 자율적으로 다른 처·실에 사무국의 권한을 이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학의 대외적 자율성 확보를 위하여 대학의 예산 편성권과 직원 인사권을 총장이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2006년 4월 20일에 서울대학교 민주화교수협의회가 개최한 “새 총장에게 바란다, 서울대 발전을 위한 당면 과제”라는 토론회에서도 예산 편성권과 자체 감사권을 기획실로 이관하거나, 예산 운영의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을 평의원회의 심의 사항이 아닌 의결사항으로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한시적으로 사무국장을 교수로 보임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한편 ‘공공기관기록물관리법’의 시행에 따라 대학 기록물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01년 5월에 서울대학교기록관이 설립되었다. 이는 종래의 대학기록관리실에 행정자료실 기능을 통합하여 확대 개편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주요 기능은 영구 보존 문서 관리, 비영구 보존 문서 이관 및 보존, 소장 기록물 열람, 연구 및 간행과 개인 기록 수증, 대학 기록물에 대한 관리 개선을 위한 연구 및 교육, 그리고

〈표 2-1-10〉 2006년 대학본부 기구표



행정 자료 관리 및 정보 공개 청구의 접수 등이다.

2006년 현재 대학본부 기구는 앞의 <표 2-1-10>과 같다.

#### (4) 국립대학교 법인화 논의

1987년 교육개혁심의회 「교육개혁종합구상」 보고서는 장기적으로 모든 국립대학교를 특수 법인화할 것을 권장하였고, 1995년 5월 31일 발표된 ‘5·31 교육개혁방안’은 원하는 일부 국립대학교를 특수 법인화하는 방안을 포함하였다. 그리고 2002년 6월, 대학 회계 제도를 도입하는 ‘국립대학교운영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하려고 할 때 기획예산처에서 국립대 법인화를 요구하였다. 이런 가운데 2003년 7월에 일본은 국립대학법 인법안을 통과시켜 2004년 4월부터 시행하였고, 이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었다.

2004년 4월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국립대학교의 공익 법인화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이후 다시 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6월 14일에 “국립대 민영화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한일 공동 토론회가 개최되었고, 6월 23일에 전국교수단체연대에서 “대학 개혁과 교육의 공공성 확립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9월 2일에는 국회좋은교육연구회와 학벌없는사회만들기 공동 주최로 국립대 법인화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는데, 이주호 의원은 기초 발제에서 국립대 법인화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2005년 5월에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특성화를 위한 대학 혁신 방안’ 중 하나로 국립대학교의 자율적 선택에 의한 특수 법인화 유도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고, 5월 6일에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국립대학교 대학 회계 제도 도입, 국립대 법인화 추진 방침을 발표하면서 이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주장하는 국립대 법인화 도입의 취지는 ① 경쟁적 대학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립대학교 체제를 재구축함으로써 새로운 국립대학교의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 ② 자율적 대학 운영과 자주적 대학 발전을 통해 대학 본연의 교육과 연구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체질을 개선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 ③ 대학의 조직 및 인사, 재무, 교육, 연구 등 대학 운영 전반에 걸친 운영 방식 및 그 결과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의 소재를 명시함으로써 대학의 책임 경영제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 ④ 국제 경쟁 양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경쟁력 있는 대학을 구축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 있는 국가 차원의 대학을 육성할 수 있다는 것, ⑤ 지역 발전의 교육 및 연구, 문화 거점으로서 기능을 발휘하는 특성화 대학을 육성할 수 있다는 것 등이었다.

2005년 7월 28일에 국회좋은교육연구회 주최로 ‘국립대학교 발전을 위한 법제화 방안-국립대 법인화 및 대학 회계 제도 도입 검토’ 공청회가 열렸고, 8월 16일에는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서울대학교 등 8개 국립대학교 총장을 만나 법인화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또한 10월 6일에는 김영식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이 국립대학교 법인화에 대한 기자 브리핑에서 특수 법인화한 국립대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을 유지할 방침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교수노조, 전국교수단체연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기관본부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등에서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고, 10월 12일에는 ‘국립대법인화저지와 교육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를 결성하여 법인화 반대 운동을 펼쳤다.

법인화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경영 합리화 및 재정 확보 자구책 강화, 대학 운영 자율성 확보, 인사 운영의 융통성 확대 등을 통해 대학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법인화에 반대하는 측은 대학의 재정 안정을 위한 제도가 미흡하고, 대학 자율성 및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며, 학문의 상업화와 수요주의로 인해 기초 학문이 위축되어 결과적으로 교육 공공성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는 2005년 9월 28일에 “국립대학 법인화,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여기에서는 국립대의 존재 이유와 법인화의 조건, 국립대 법인 재정·회계와 지배 구조의 문제점, 국립대 법인 체제에서 학문의 발전 보장 문제 등을 논의하였다.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법인화 이후 대학 재정 안정을 위한 제도 미흡, 이사회의 대학 자율성 및 독립성 훼손 우려, 학문의 상업화로 인한 기초 학문의 고사 위기 초래 등을 이유로 법인화에 반대하였다. 이에 대해 일부 교수들은 “국립대 법인화는 국립대의 시스템을 개혁해 경쟁력 없는 국립대를 퇴출시키고 국립대에 대한 국가 지원을 효율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구성원들의 합의를 전제로 법인화에 찬성하는 입장을 펴기도 하였다. 교수협의회장 장호완 교수는 “재정의 안정적 지원, 예산 편성의 유연성, 자율적 개혁의 유도 등이 법인화의 전제 조건으로 충족되어야 한다”며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11월 30일에는 교수협의회에서 교수 1,577명(응답자는 823명)을 대상으로 10월 20일부터 11월 11일까지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설문 조사 결과 “빠른 시일 내에 법인화로 나아가야 한다”가 8.3%, “법인화는 선결 조건이 갖춰진 이후에 추진해야 한다”가 41.6%, “현재 국립대 체제의 큰 틀은 유지하고 구조 조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가 39.6%, “현재의 국립대 체제를 바꿀 필요가 없다”가 8.7%로 나

타났다. 법인화의 긍정적 효과로는 “대학 운영의 자율성 확대”(49.9%), “인력 운영의 효율화”(54.2%), “재정 운용 효율화”(44.5%) 등을 꼽았고 부정적 효과로는 “정부 재정 지원의 불안정”(83.5%), “학문 간 균형 발전 저해”(72.3%), “근무 여건 악화”(55.7%) 등을 지적하였다. 법인화의 선결 조건으로는 “획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확충”이 88.9%로 가장 많았고 “학생 선발 자율권 보장”(88.8%), “교직원 인사 자율권 보장”(88.4%) 등의 순으로 지적되었다. 또 현재 정부안대로 법인화가 추진될 경우 “서울대가 퇴보할 것”이라고 응답한 교수는 53.8%로 나타났으나, “서울대가 발전할 것”이라고 응답한 교수는 23.6%에 불과해 다수의 교수들이 법인화 이후 서울대학교의 장래를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수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서울대가 세계 수준의 대학으로 살아남으려면 변화와 개혁이 필요함을 절감하고 있다”며 “법인화의 선결 조건은 대학의 자율성 확대와 대학 재정의 확충”이라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6년 1월 3일에 대학 특성화 추진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이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정부 입법 절차를 진행해 상반기 중에 특수 법인화와 대학 회계 제도의 근거 법안인 ‘국립대학교운영에관한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2007년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오는 2010년까지 서울대학교를 포함하여 5개 내외의 국립대학교를 특수 법인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또 2006년부터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등 정부 부처들이 대학에 재정 지원을 할 때는 지원 대상 분야 등을 교육부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였다. 이는 정부 지원을 대학별 강점 분야에 집중시켜 대학 특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이다. 교육부는 대학 특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국가인적자원위원회 산하에 대학특성화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부처별로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 사업을 설계할 때 사업의 목표와 평가 지표, 지원 분야 등에 대해 사전 협의하여 조정할 것을 제도화하기로 하였다. 또 교육부는 범정부적 협력 체제를 마련하고 특성화 정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원 및 성과에 대한 관리 체제의 구축, 재정 지원에 관련한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대학특성화지원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교육인적자원부는 울산국립대학교를 특수 법인으로 2009년에 신설하기로 하였고, 인천대학교도 2009년 3월부터 특수 법인 형태의 국립대학교로 전환하기로 하는 양해 각서를 2006년 4월 3일에 체결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인천대학교의 법인화에 따라 자율 경영 및 대학 회계 제도를 도입하고, 총장 선출 제도를 간선제로 개선해 인천대학교를 새로운 국립대학교의 혁신 모델로 육성하기로 하였다.

한편 서울대학교는 2005년 11월 말부터 서울대학교 법인화 방안을 연구하는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하여 교육인적자원부의 법안 발의에 대비해 법인화로 전환할 경우의 모델 등을 연구하고 있다. 정운찬 총장은 “서울대는 부족한 국고 지원 예산, 미흡한 대학 자율성 등 세계 수준의 대학으로 도약하기에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개인적으로 법인화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해 법인화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장무 신임 총장도 “대학의 자율성, 국립대로서의 정체성, 재정의 안정성 등 세 가지가 먼저 충족돼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법인화는 장점이 많기 때문에 국립대 틀 안에서 어떻게 도약의 기회로 삼을 것인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임기 중에 서울대학교 발전에 가장 적합한 법인화 방안을 대학 구성원 모두와 함께 협의하여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 2) 대학 운영 체제의 개선

### (1) 평의원회의 부활

1987년 이후 대학 운영 체제의 개선과 관련하여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대학 자율화와 대학 운영에 대한 대학 구성원의 참여의 확대였다. 그중 대학 운영의 자율화와 관련하여서는 학내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평의원회가 논의의 중심이었다.

평의원회는 1955년에 설치된 이후 사실상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고, 종합화 이후에는 구성조차 되지 못하다가 1987년 이후 대학 자율화 노력 속에서 다시 설치되었다. 서울대학교 발전장기계획에서 평의원회를 구성하여 최고 의사 결정 기구로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던 것인데, 당시에는 평의원회가 교육법과 학칙에는 규정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운영되고 있지 않던 상황이었다.

1988년 12월에 대학 발전과 교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심의 기구로 평의원회가 다시 설치되었다. 평의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대학 또는 부설 기관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2. 학과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3. 학칙 및 기타 제 규정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4. 연구비·장학금 기타 제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예산 운영의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
6. 교원 인사의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7. 기타 총장이 대학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평의원회는 전임 교수, 보직 교수 및 사회 저명인사 등 40인 이내로 구성하였다. 보직 교수와 사회 저명인사 중에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평의원의 수는 정원의 2분의 1 이내로 하며, 그 밖의 평의원은 교수회에서 선출하였다.

## (2) 운영 체제에 대한 논의

서울대학교의 운영 체제 전반에 대한 논의는 2000년 12월에 있었던 교육부의 ‘국립대학발전계획’ 발표, 2001년 12월의 블루리본패널 보고서, 2002년의 ‘국립대학교운영에관한특별법(안)’ 발의, 그리고 ‘서울대학교 장기발전계획’ (2002~2011년) 수립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당시까지 서울대학교에는 학교 전반에 관련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는 기구가 없었다. 다만 평교수로 구성된 단과대학 교수회만이 각 단과대학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의결권을 가질 뿐이었다. 이러한 제도적인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학칙상으로는 종합 심의 기구일 뿐인 학장회가 실질적으로 의결 기구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관례일 뿐 학칙에 명시된 것은 아니어서 법적 강제력을 지니고 있지 못하였다. 그리고 이는 각 단과대학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거나 일부 단과대학과 학교 전체 차원의 견해가 대립할 경우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이견을 조율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다양한 방안이 구상되었다. 의결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 공감하였으나 어떠한 의결 기구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다. 먼저 교육부의 국립대학발전계획에서는 외부 인사를 다수 포함하여 다양한 학내외 인사 20~40인으로 구성되는 가칭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하여 이를 의결 기구로 할 것을 구상하였다. 이는 학내에 민주적 의사 결정 기구를 도입함으로써, 일부 교수 중심의 폐쇄적 대학 운영 체제에서 벗어나 학내 구성원 및 지역 사회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다. 2001년 12월의 블루리본패널 보고서에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총장을 임명하고, 서울대학교를 대표하여 정부와 협상하며, 대학 당국에게 성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역할을 담당할 이사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사회의 구성은

교수, 교육인적자원부 대표, 동창, 일반인과 외국인 학자 등 14인 정도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이 두 방안은 총장 선출 방식을 임명제로 전환하고 학외 인사를 다수 참여시킨다는 점에서 비슷한 관점을 가졌는데, 이에 대해 교육부의 통제를 강화하여 결국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교수협의회 이사회에서는 2001년 10월 8일에 교수협의회를 법정화하여 의결 기구로 확립할 것을 의결하였다. 그러나 법정화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은 문제로 교수협의회는 2006년 현재까지 임의 기구로 남아 있는 형편이다. 2001년에 나온 연구 보고서 「서울대학교 평의원회의 강화 방안 연구」는 평의원회를 예·결산 및 감사는 물론 서울대학교 장기발전계획 등 학교의 제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개편할 것을 제시하였다. 비전문가인 관료의 개입에서 벗어나 학과(부) 및 단과대학의 자율성과 그들 사이의 균형적인 발전이 가능한 운영 체제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때 평의원회는 주요 보직 교수와 단과대학 대표, 교수협의회 대표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위의 두 대안은 모두 서울대학교에 의결 기구가 없고 교수협의회와 평의원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문제 의식에서 나온 것이었다.

2002년 11월 27일에는 교수협의회에서 “서울대학교 운영 체제 개선 대토론회”를 열어 명실상부한 대의 기구로서 교수의회를 설치할 것을 주장하였다. 발제자인 이성원 교수(영문학)는 교수회에서 직접 선출한 총 50~100명의 대표로 교수의회를 구성하여 학내의 기본 정책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민주적 운영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교수의회는 대학의 자율성 제고, 대학 구성원의 광범위한 여론 수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 총장을 비롯한 집행부에 대한 견제 등의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설정되었다.

서울대학교 장기발전계획은 대학의 기본 정책, 발전 방향, 재정 운용, 대외 관계에 관하여 총장을 자문하고 총장의 직무 수행을 평가하는 서울대학교정책심의회(가칭)를 설치할 것과 명실상부한 대의 기구로서 학내의 기본 정책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교수의회(가칭)를 설치할 것을 골자로 하는 운영 체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학내 의사 결정의 합리화와 민주화, 대학 구성원의 여론 수렴을 위해 최고 의결 기구를 구성하여, 총장에게 집중된 의결권과 집행권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구상이었다. 교수의회에 관한 내용은 대체로 2002년 11월에 열린 교수협의회 토론회 결과를 수용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구상은 결국 현실화되지 못하였다.

한편 정부와의 관계에서 자율성을 획득하는 것이 과제라는 의견도 계속해서 제기되



었다. 교육부가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국립대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유는 재정권과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대학교의 예산에 관한 업무는 대학 내 교육부 소속국인 사무국에서 담당한다. 편성 지침에 따라 예산 항목을 결정하고 교육부와 기획예산처를 거쳐 국회의 의결을 받은 후 확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학내 정책에 대해 교육부나 정부 관계자가 크게 영향력을 미친다. 또한 직원의 인사권이 교육부에 있어 업무를 수월하게 진행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많다. 장기적이고 전문적인 능력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 전문 직원들이 다년간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대학과 달리 서울대학교는 잦은 인사 이동으로 인해 업무 효율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총장에게 교직원 인사권 등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대학이 행정 당국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야 하며, 이는 구체적으로 총장이 예산권과 인사권의 주체가 되고 교육 행정은 고등 교육과 관련하여 지원 및 정책 입안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학사 운영에 학생과 직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1999년 1학기에 학사 관리 엄정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처음 소집된 '교육환경개선협의회'에 학생들이 참여하였고, 2006년의 총장 후보자 선거부터 직원들의 투표권이 일정 부분 보장되는 등 대학 운영에 다양한 학내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시도하고 있다.

### (3) 평의원회의 심의·의결 기구화

2003년 4월에 서울대학교 운영체제개선연구팀에서는 「서울대학교 운영체제개선 연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는 운영 체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개선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특히 총장 선임 방식의 개선과 평의원회 강화를 주장하였다.

보고서는 먼저, 서울대학교 운영 체제의 문제점으로 ① 대학 자율성 제약, ② 민주적, 합리적 의사 결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 취약, ③ 행정 분권화 및 분산화 미흡 등 세 가지를 지적하였다. 평의원회와 관련하여 ①과 ②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먼저 대학의 자율성은 일차적으로 정부로부터의 자율성이다. 보고서에서는 서울대학교의 경우 학생 선발, 학생 및 교수 정원, 교수 채용, 직원 인사, 재원 조달, 예산 집행, 교직원 보수, 학사 조직 개편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교육인적자원부가 일반 원칙은 물론 세부 사항까지 간섭하는 등 관료적으로 통제하는 실정이라고 하였다. 대학의 자율성에 대한 이러한 제약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빈번한 교체, 대학 정책의 비일관성과 더불어, 대학이 장

기적인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발전 전략을 실천하는 데 중대한 장애가 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한 서울대학교 내부적으로 대학 운영을 위한 의사 결정이 일반 교수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 이는 민주적 의사 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고, 기존의 의견 수렴 기구 또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학 발전과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의회가 설치되었으나, 이 기구는 본질과 성격상 총장의 심의 기구로서 일반 교수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상향적 의사 소통에 능동적으로 기여하지 못하는 등 대의 기능 수행이 제한적이라고 평가하였다. 평의회는 실제로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회의를 소집하고 있으며, 구성원들이 평의회 역할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평의회의 권한을 행사하려는 의지가 부족하여 대체로 형식적인 기구로 운영되었다. 결론적으로 평의회의 문제점은 교수의 대의 기능이 미흡하다는 것이었다.

보고서는 이를 바탕으로 서울대학교 평의회 강화(의사 결정 기구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그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대학교 평의회는 대학 운영의 대외적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대학을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서울대학교를 타 국립 대학과 동일한 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지원 또는 규제하려는 정부의 개입은 최대한 억제되어야 한다.

둘째, 정보화와 분야별 전문성이 급속하게 심화되는 시대에 세계 일류 대학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고 인류 사회의 발전을 선도하는 위치를 다지기 위해서는 학문 분야별 전문성에 기초한 대학의 운영이 무엇보다 시급히 요구된다. 그러므로 서울대학교 평의회는 학과(부) 및 대학(원)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서울대학교 평의회는 학문 분야별 자율성과 더불어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기초 학문 분야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가능한 방향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본 방향에 입각하여 제시된 평의회 강화 방안은 이후 개정된 평의회 규정에 거의 그대로 반영되었다.

서울대학교는 대학 자율성을 보장하고 구성원 간의 의사 소통이 원활하며, 총장이 지도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2003년 8월 23일에 학칙 등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이에 의거해서 평의회는

심의 기구에서 심의·의결 기구로 그 기능이 강화되었다. 이로써 평의원회는 학교 전반에 관련한 사항을 의결할 최종 의사 결정 기구로서 명실상부한 위상을 가지게 되었다.

평의원회의 구성과 권한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평의원회의 심의 및 의결 사항에 대한 규정이다.

#### 의결 사항

1. 교육 및 학사 운영의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2. 대학(원) 또는 부속 시설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3. 학부·학과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4. 교원 인사의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5. 총장 후보 선정에 관한 사항.
6. 위 각 호와 관련된 학칙 및 기타 중요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심의 사항

1. 학칙 및 기타 중요 규정(제9항 제6호에 규정된 학칙 등은 제외)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대학의 중장기 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
3. 예산 운영의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
4. 기타 총장, 의장 또는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이 대학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평의원회의 구성은 교수회가 선출하는 전임 교수 및 총장이 위촉하는 학외 인사 등 50인 이상 100인 이내의 평의원으로 하되, 총장이 위촉하는 학외 평의원 수는 전체 평의원의 4분의 1 이내로 하도록 하였다. 다만 총장, 부총장, 학장, 처·실장, 도서관장, 부학(원)장, 부처·실장 및 본부장 등 주요 보직 교수는 평의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평의원회 산하에는 평의원회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두고, 상임 위원회로 학사위원회, 재정위원회, 기획·연구위원회 및 캠퍼스생활위원회를 두었다. 학사위원회는 교육 및 학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재정위원회는 예·결산 및 재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기획·연구위원회는 기획 및 연구 등에 관한 사항을, 캠퍼스생활위원회는 교직원 및 학생의 캠퍼스 생활 및 복지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특별위원회를 두어 평의원이 아닌 교수, 학

생, 직원, 동문, 학부모 및 학외 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참여의 폭을 넓혔다.

또한 평의회는 총장 선출에 관여할 수 있었다. 기존에는 대학(원)에서 총장후보선출위원회를 구성하던 것과 달리 4분의 1 이하의 평의회 위원과 평의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교수 50인 이내의 위원이 총장 후보를 선출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평의회 관련 규정의 개정에 대해 대부분의 교수들은 민주적인 의사 소통 체계를 이루는 데에 한 걸음 나아간 성과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개정안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평의회가 실질적인 대의 기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예산 등 모든 사안에 대해 의결권을 갖는 교수의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평의회에 교직원과 학생 대표가 참여할 수 없어 구성원 간의 의사 소통을 원활히 한다는 취지가 무색하다는 평가도 있다. 그리고 평의회 구성원 중 학외 인사의 구성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 특히 학외 인사가 정·관계와 재계의 고위 인사들로 편중된 점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었다. 인문대학의 한 교수는 “학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학외 인사를 평의원으로 뽑게 되는 구조에서는 학내 사안을 제대로 모른 채 본부의 자료나 여론에 영합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므로, 총장이 위촉하는 학외 인사의 경우, 자격 조건을 반드시 미리 공표한 후 학내 구성원의 동의를 구한 다음, 그에 맞는 적절한 인물이 위원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와 같은 논의 속에서 2003년 11월, 학내 인사 52명, 학외 인사 13명 등 총 65명으로 제8기 평의회가 구성되어 활동하였고, 2005년 11월에는 제9기 평의회가 구성되어 현재 활동 중이다.

### 3) 대학 행정의 효율화와 분권화

#### (1) 행정 직원의 감축과 자질 향상 노력

1987년 이후 행정 기구의 개편과 발전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자율성과 효율성의 제고였다. 이는 1975년의 종합화 이후 행정 조직이 점차 관료화하면서 효율성이 크게 떨어졌고, 대학본부가 비대화하면서 단과대학의 자율성이 약화되었기 때문이었다.

정부는 1993년 6월에 국가 공무원 정원을 동결하고 결원에 대한 충원을 방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시작으로 1994년도의 국립대학교 직원 감축, 1996년도의 생산성 10% 제고를 위한 행정 지원 인력 감축 및 1998년도의 정부 조직 개편 등 지속적인 정부

의 대학 직원 감축 방침에 따라 서울대학교도 행정 지원 인력을 감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서울대학교는 연구 중심 대학이라는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고, 그러한 시책 중 하나로서 대학 행정 조직의 효율적인 편제와 운영을 위하여 기존 행정 조직의 전반적인 기능과 업무량 배치 및 인력 등을 분석·검토하였다. 1997년에는 『서울대학교 행정조직개편에 관한 연구』가 있었으며, 1998년에는 『정부의 대학직원 감축방침에 따른 행정체제개편과 인력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 등을 통하여 조직과 행정 체제 전반에 걸친 자체 진단을 실시하였다. 그 진단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첫째, 조직과 행정 체제의 개편, 즉 본부, 대학, 학과(부), 지원 기관, 연구소 등의 역할 정립과 직원 배치의 합리화, 둘째, 인력 감축에 따른 인력 최소화 방안, 셋째, 대학 효율화를 위한 대학 행정 체제의 개편, 넷째, 대학 구성원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을 통한 현실적 문제 해결 방안의 모색이었다.

또한 교육 개혁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대학의 구조 조정에 관한 원칙 및 실천 계획 등을 수립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에서는 대학구조조정위원회를 한시적으로 구성하였다. 구조조정위원회는 부총장을 위원장으로, 그리고 이공계 대학 학장 4명, 인문사회계 대학 학장 4명, 처·실장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하였다. 동 위원회는 대학의 구조 조정에 관한 원칙 및 실천 방법을 심의하며, 보직 교수와 구조 조정 관련 전문 교수로 구성된 대학구조조정실무위원회의 검토 결과에 대한 심의 및 검토 방향 설정 등을 주요 업무로 하였다.

직원 감축의 주요한 방법 중 하나는 사무의 위탁 관리였다. 신축 건물의 청소 등 단순 업무를 민간 용역으로 전환하면 인력 관리에 따르는 부담을 경감하고, 정규 직원을 채용할 때 발생하는 노령화, 퇴직금 부담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외에도 외부 용역 활용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전문 인력을 효율적으로 유연하게 공급할 수 있다. 민간 용역으로의 전환은 단계적으로 수행되어, 1단계는 전화·통신 분야, 전기·기계·설비 분야에 한해서 실시되었고, 2단계(1995~1997년)는 위생(청소) 업무로 확대되었으며, 3단계(1998년 이후)는 방호(경비)까지 전면 확대되었다. 향후 보다 전문화된 영역까지 용역화하여 고가 기기의 유지와 관리도 포함하게 된다.

이러한 민간 용역으로의 전환과 더불어 결원 충원을 중지하고 유사 업무를 통폐합하며 보유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서울대학교는 1994년 3월부터 1995년 2월까지 정원을 36명(일반직 6명, 별정직 1명, 기능직 26명) 감축하였다. 이후에도 직원

감축 노력이 계속되어 1995년 3월부터 1996년 2월까지 행정 직원을 총 65명 감축하였고, 1996년과 1997년에 일반직 50명, 기능직 108명, 기성회직 34명 등 총 192명을 감축하였다. 1998년과 1999년에도 일반직 44명, 기능직 109명, 기성회직 26명 등 총 179명을 감축하였다.

이러한 감축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교수 1인당 직원 수는 외국 주요 대학의 10~15%, 국내 주요 사립대학교의 60% 수준이며, 직원 수 대 교수+학생 수의 비율은 외국 주요 대학의 4~27%, 국내 주요 사립대학교의 82% 수준에 불과하여 연구 지원 인력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한편, 연구 중심 대학으로의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육과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업무가 중요하며, 따라서 인력 감축은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 방안과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서울대학교는 행정 절차 개선, 위임 전결 업무 확대, 직원 능력 개발을 통한 효율성 제고 등의 다양한 방법을 추진하였다.

먼저 행정 절차 개선을 통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결재 단계를 축소하여 처·실·국의 사무관 결재 단계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1996년 5월에 있었던 사무관리규정 제16조의 개정에서 서울대학교의 사무 분장 규정과 전결 사항 규정을 개정하였다. 이를 보면 46건은 총장의 결재 사항을 명시하여 권한을 명확히 하였으며, 64건에 대해서는 위임 전결에 의해 처리하도록 하였다. 이후 위임 전결 사항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음으로, 직원의 능력 개발을 위해서는 직무 분야, 전산 분야, 외국어 분야 등 다양한 직렬별 전문 교육을 실시하였다. 1996년에는 34개 과정 77명, 1997년에는 32개 과정 105명, 1998년에는 61개 과정 129명, 1999년에는 47개 과정 111명이 위탁 전문 교육을 받았고, 2000년 들어와 크게 증가하여 2000년에는 2,051명, 2001년에는 784명, 2002년에는 417명, 2003년에는 472명이 위탁 전문 교육을 받았다. 또한 직원의 능력을 개발하고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장단기 해외 연수를 실시하여, 1996년에는 74명, 1997년에는 36명, 1998년에는 6명, 1999년에는 22명, 2000년에는 28명, 2001년에는 30명, 2002년에는 34명, 2003년에는 37명이 참여하였다.

## (2) 단과대학 행정실의 통합 운영

1995년 2월 28일에 서울대학교설치령이 개정됨에 따라 단과대학과 대학원의 학장보와 원장보를 폐지하고 관련 업무를 행정실로 통합하였다. 서울대학교의 경우 단과대학

및 대학원에 교수가 겸보하는 학장보 및 원장보를 두어 그 산하에 행정 조직을 설치·운영하여 왔는데, 이를 폐지하여 다른 국립대학교와 같이 행정실로 통합하여 운영하게 된 것이다.

서울대학교설치령의 개정 조치는 1994년 4월에 있었던 국립대학교의 조직 및 인력 운용 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사립대학교에 비해 국립대학교의 행정 조직이 지나치게 방만하다는 것에 따른 것이었다. 교육부는 학과 통합, 보직 축소, 단과대학 조직의 합리화, 대학본부의 조직 개선 및 일반직 공무원 감축 등의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 개정안도 그러한 배경에서 보직 축소 작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었다.

그동안 단과대학 행정 조직이 지나치게 세분화되고, 행정 조직 간 업무 배분의 주기별 차이가 심하며, 대학 간에 업무량이 차이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비효율적인데도 여전히 서무, 교무, 학생이라는 전통적인 업무 분류 방식을 답습함으로써 변화하는 행정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에 1995년부터 ① 사무실 및 업무를 통폐합하고 보조 요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며, ② 행정실장이 교무·학생행정실 업무까지 총괄하도록 하고, ③ 부학장은 교육, 연구에 관하여 학장을 보좌하도록 하는 등의 개선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18개 대학(원)에 54단위이던 대학행정실은 36단위가 축소되어 18단위로 되었다.

행정실의 통합을 추진한 결과, 조직 개선을 통한 인력 관리의 효율화, 인력의 합리적 운용, 유사 업무의 집중화로 인한 업무 연계성 강화, 대학(원)의 업무 통합으로 인한 교수·학생 중심의 업무 체계 구축 등,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는 효과를 얻었다. 또한 인력의 탄력적 운용이 가능하게 되고, 순환 보직이 가능하게 되어 업무의 효율화에 기여하였고, 불필요한 서류의 감축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얻게 되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조치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학장보가 폐지됨으로써 행정실장이 단과대학의 최고 의결 기구인 학과장 회의에 참석하게 되어, 의사 결정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즉, 학내 문제가 행정관료에 의해 좌우될 공산이 커졌다는 것으로 대학 행정이 더욱 관료화할 것이라는 우려이다. 결국 정부의 교육 정책이 학사 정원이나 졸업 이수 학점의 조정 등 형식적인 부분에서는 대학의 자율성을 인정하면서도 재정·인사 등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효율성을 내세우며 교수와 학생 참여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진정한 대학 개혁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었다.

### (3) 행정 기능의 분권화

한편 그동안 대학본부에 집중된 권한과 기능을 단계적으로 단과대학 및 학과(부)로 분산시켜 학사 관리는 물론 행정 사무의 상당 부분도 관장하도록 하였다. 이는 본부에 집중된 행정 권한을 단과대학 및 학과 등의 단위 기관에 적절히 위임함으로써 대학 민주화와 분권화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할 수 있으며, 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책임 행정을 구현할 수 있으며, 교육 및 연구 지원을 위한 대학 행정 본연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동안 대학본부 비대화와 행정력 집중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1996년에 김광웅 교수(행정학)는 “본부 규모가 너무 크고 인원이 많아 예산 낭비가 심할뿐더러 효율적인 운영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지금보다 더 기구와 인원을 과감히 축소해야 한다”고 하였다(『대학신문』 1996년 10월 7일자). 본부 규모가 축소되면 중앙에 집중되어 있던 행정력이 자연히 단과대학으로 분산되어 수평적 조직 구조를 갖출 수 있다는 것이다.

2003년 4월에 서울대학교 운영체제개선연구팀에서 제출한 「서울대학교 운영체제개선 연구결과 보고서」에서도 서울대학교 운영 체제의 문제점 중 하나로 행정의 분권화 및 분산화가 미흡하다고 지적하였다. 보고서는 대학 행정의 권한과 업무가 대학본부에 집중되어, 각 대학(원)의 요구에 적합하게 집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대학 행정이 적정하게 분권화되거나 분산될 필요성이 있음을 제기하였다.

단과대학 및 학과(부)에 위임된 권한과 업무 중 주요 사항은 학사과정 및 대학원과정의 입시 관련 업무, 논문 제출 자격시험의 관리, 교원의 재직 및 학생의 재학 증명 발급 등이다. 그리고 기성회의 분임 재무관 및 지출관을 단과대학(원)장 및 행정실장에게 위임하였다.

이상과 같이 최근의 운영 체제의 변화와 기구 개편은 행정의 효율화와 분권화라는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행정의 효율성을 위한 기구 축소는 대학의 교육·연구 기능 강화와 모순될 소지가 있다. 또 사무의 위탁 관리도 비정규직을 양산한다는 측면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적 과제를 외면한다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대학의 기능 강화와 효율성의 추구라는 두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새로운 운영 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일 것이다.





## 제2장 대학 발전 계획의 수립과 추진

대학 발전 계획은 서울대학교가 처한 상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지향할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일종의 로드맵을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발전 계획에는 정부의 고등 교육 정책 방향, 대학 구성원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대학상과 함께 사회가 대학에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 등이 응축되어 있다. 서울대학교에서 처음으로 종합적인 발전 계획을 구상한 것은 1960년부터 발표된 일련의 종합화 계획이었다. 종합화 계획은 1968년에 입안된 '서울대학교 종합10개년계획' (1968~1977년)에서 집대성되어 서울대학교가 명실상부한 종합대학교로 발전해 나가는 지침 역할을 하였다. 이후 1979년과 1983년 '서울대학교 발전10개년계획'을 연구 보고서 형태로 발표하였고, 공식적인 발전계획으로 '서울대학교 발전장기계획' (1987~2001년)과 '서울대학교 장기발전계획' (2002~2011년)을 발표하였다. 이상의 발전 계획은 서울대학교의 발전 방향을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 제 1 절 캠퍼스와 대학 운영의 종합화: 서울대학교 종합화 계획

서울대학교는 종합대학교를 표방하며 창립되었으나, 캠퍼스가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 있고 학사 행정이 단과대학 중심으로 운영되는 등 개교 이래 상당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는 연립대학교의 성격을 띠었다.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종합화를 지향하는 방안을 계획하였다. 종합화 계획은 '종합7개년계획' (1960년), '종합5개년계획' (1962년), '종합6개년계획' (1966년)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수정되었고, 최종적으로 1968년에 '서울대학교 종합10개년계획' (1968~1977년)이 입안되었다. 이후 '서울대학교 종합10개년계획'은 캠퍼스종합건설계획(Campus Master Plan)과 교육연구 및 기구조직계획(Academic Plan)으로 구체화되었다.

### 1) 종합화 계획의 수립 과정

1959년에 서울대학교는 종합화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종합계획수립위원회를 총장 자문 기관으로 설치하였다. 종합계획수립위원회는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고, 주로 교사의 배치, 시설의 확충과 변경 및 확보 등의 문제를 담당하였다. 당면 목표로 12개 단과대학의 실태를 파악하는 동시에 건물과 시설 등의 재산 평가에 역점을 두어 활동하였다. 그 결과로 동 위원회는 1960년 6월에 1960년을 기점으로 하는 종합7개년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계획의 골격은 지역적으로 분산된 서울대학교를 중앙부(동승동), 수원, 공릉동, 용두동 등 4개의 중심 지역으로 집중하여 연구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종합7개년계획은 1962년 5월의 문교부 지시에 의하여 종합5개년계획으로 수정되었는데, 재정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이전의 계획보다는 실현 가능성이 높았다. 종합5개년계획은 1960년에 한국고등교육기관조사단에서 제출한 「한국 국립고등교육기관 실태조사보고서」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1962년부터 1966년까지 '동일 계열 대학의 동일 지역 집중'이라는 원칙에 따라 교사를 재배치한 것이었다. 구체적으로는 ① 본부 중심의 인문사회센터, ② 미술대학 중심의 예능센터, ③ 의과대학 중심의 의치약센터, ④ 사범대학 중심의 교육센터, ⑤ 공과대학 중심의 공업센터, ⑥

농과대학 중심의 농업센터를 조성한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았고, 상과대학의 이전 예정 부지에 있던 상공부 소관의 중앙공업연구소가 이전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종합5개년계획은 실패하고 말았다.

그러자 당시 신태환 총장은, 1966년부터 1970년까지를 사업 기간으로 하여, 캠퍼스를 ① 인문사회센터, ② 의약센터, ③ 교육센터, ④ 공업센터, ⑤ 농업센터 등의 5개 센터로 통합하고, 각 센터별로 동계기구(同系機構, 교무·학생·서무과)를 종합하여 단일 행정 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의 새로운 종합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총장의 교체와 함께 이 계획은 다시 1966년 5월에 종합6개년계획으로 변경되었다. 1966년부터 1971년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 이 계획은 ① 대학의 자율성, ② 서울대학교의 종합화, ③ 연구 재단 설립, ④ 성적 평가 기준의 표준화, ⑤ 연구 활동의 조성 등 여러 방면에 걸친 개혁 방안이었다. 기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의 자율성: 대학이 대학으로 기능을 발휘하고 대학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자율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2. 본교의 종합화: 8개소에 분산되어 있는 각 단과대학은 지리적으로 이전이 불가능한 농과대학·공과대학을 제외하고 동승동으로 이전 통합된다. 즉 8개 캠퍼스를 3개 캠퍼스로 통합한다.
3. 연구 재단 설립: 앞으로는 연구 재단을 만들어 자유롭게 연구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 재단을 발족한다. 또 본교 교수들의 권위가 존중되도록 하고 학문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근본적으로 법 제도를 개정한다.
4. 성적 평가 기준의 표준화: 본교가 국가의 대학이고 민족의 대학이라는 견지에서 참다운 민족의 엘리트가 될 수 있도록 학업 성적을 엄격히 다룬다.
5. 연구 활동의 조성: 현재 본교 연구 기관의 연구가 빈약하고 상호 협조와 연결이 부족한 문제점을 제거하고 연구 활동을 활발히 하기 위하여 정부 각 부처를 위시한 각 단체와 총괄적인 계약을 맺음으로써 국가의 연구 업적을 향상시킨다.

종합6개년계획에 필요한 예산은 약 80억 원으로 책정되었는데, 서울대학교의 기존 시설을 매각한 재원 약 34억 7천만 원과 대일 청구권 자금 46억 원으로 충당할 계획이었다. 1967년 음악대학과 치과대학의 이전 공사가 시작되면서 이 계획은 실현 단계로 들어섰다.

이런 가운데 1967년 11월에 최문환 총장이 문교부 장관과 함께 박정희 대통령에게

종합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계획의 소규모성을 지적하며 10개년의 대규모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하였고, 종합화 계획은 다시 수정되었다.

## 2) 서울대학교 종합10개년계획의 수립

서울대학교를 “후세에 자랑할 수 있는 국제 수준의 대학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계획조사과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과 건의를 토대로 연구와 조사를 수행한 지 2개월 만인 1968년 1월에 ‘서울대학교 종합10개년계획’(이하, 종합10개년계획)을 성안하였다. 이 계획은 정부의 협조를 얻어 1968년 4월 15일에 대통령령에 의해 국가 시책으로 확정되었다.

1968년 4월에 최종적으로 확정된 종합10개년계획의 목표는 대학 본연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과 학술 연구의 진흥을 도모하고 모든 시설을 근대적 시설로 확충하여 세계 일류 수준의 대학으로 육성, 발전시키는 데 있었다. 종합10개년 계획은 다음의 다섯 가지 기본 원칙을 전제로 하였다.

첫째, 서울대학교는 학문적 유산의 계승과 지식의 전통 및 개발을 위한 자유로운 연구 및 교육 활동을 목표로 하여 뛰어난 학자를 핵심으로 조직된 학문 사회이다.

둘째, 대학은 사회로부터 유리되거나 독립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사회와 더불어 발전하는 것이므로 서울대학교의 발전은 한국 사회의 장래와 결부시켜 계획되어야 한다.

셋째, 서울대학교의 교육은 나날이 발전하고 분업화하는 사회에서 지적 독창력과 실천력을 겸비하여 창조적 활동이나 의사 결정의 역할을 자신 있게 감당할 수 있는 지성인의 양성에 주목적을 둔다.

넷째, 대학의 연구 및 교육은 학문의 자유가 충만한 가운데서 성공할 수 있으며, 그러한 자유의 책임 있는 수호와 운영은 교육 내용, 재정, 인사 등 모든 면에서 대학의 자율성이 확대되었을 때만 가능한 것이다.

다섯째, 서울대학교의 교육 기구, 교육 과정의 조직 편성, 그리고 교육 내용의 우선순위 결정은 행정적 및 사회적 필요를 고려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학문적 전통과 원칙에 따라서 과감하게 개혁 편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본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주요 방침이 설정되었다.

1. 대학 교육을 강화함은 물론 대학원 중심의 대학교로 발전시킨다.
2. 새로운 학풍의 조성을 위하여 장학 기금을 마련하고 학생 3분의 1을 기숙사에 수용한다.
3. 교양과정부를 신설, 법제화한다.
4. 시대적 요청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교과 과정을 연구 개편한다.
5. 교수의 해외 파견 연수를 조장한다.
6. 학술 연구를 위한 연구비를 확보하고 각종 연구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산학 협동에 힘쓴다.
7. 학술 연구 재단을 육성시켜 연구 교수 제도를 확립한다.
8. 국외 저명한 대학과 유대를 강화하며 국제 문화 교류를 통한 공동 연구를 실시한다.
9. 학술 도서와 실험용 기구를 연차적으로 확보한다.
10. 보건진료소의 기능을 강화하며 학생 보건 관리의 철저를 기한다.
11. 10개년 연차로 법정 교수 인원을 모두 확보한다.
12. 행정 지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행정 조직 기구를 강화한다.
13. 동계 단위(同系單位)별로 캠퍼스를 종합하여 근대 시설로 종합 캠퍼스를 조성한다.
14. 의대 부속 병동을 근대적 시설로 5개년 계획에 의하여 개축한다.
15. 시설의 확충·통합·이전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 확충 특별 회계를 법제화한다.

한편 종합대학교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대학 운영을 합리화하기 위해 각 지역에 분산된 각 대학과 기관을 3개의 캠퍼스, 즉 메인 캠퍼스, 의·약 캠퍼스, 농업 캠퍼스로 통합하도록 하였다. 그중 메인 캠퍼스는 165만 평의 부지를 확보하여 의·약계와 농업계를 제외한 모든 캠퍼스를 이전·종합하여 조성하도록 하고, 당시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의·약 캠퍼스는 노후한 부속 병원을 개축하는 외에 치과대학 및 그 부속 병원과 생약연구소를 신축하도록 하였다. 농업 캠퍼스는 당시 농과대학을 중심으로 조성되되 농림산물 가공을 위주로 한 실험 실습실과 축산 장려를 위한 동물 사육장, 기업농을 위한 경제 농장을 확충하며, 농업 근대화의 기초 작업을 위하여 농장을 구획 정리하고 관개 등의 시설을 현대화하도록 계획하였다.

또한 종합화에 따라 행정 기구를 개편하여, 현행 기구에 학생 담당과 사무 담당의 부총장 2명과 기획조사실을 신설하여 조사과와 인사과를 두며, 교무처에 연구과, 학생처에 보도과, 사무처에 조달과를 신설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주요 내용을 가진 종합10개년계획은 이후 교육연구 및 기구조직계획과 캠퍼스종합건설계획을 중심으로 구체화되었고, 부분적인 수정을 거치면서도 기본 골격을

유지하며 추진되었다.

### 3) 서울대학교 종합10개년계획의 추진

종합10개년계획의 추진 과정을 종합화 추진을 위한 법령 제정과 기구 설립, 투자 및 소요 자금, 교육연구 및 기구조직계획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교육연구 및 기구 조직계획과 함께 종합10개년계획의 또 다른 한 축인 캠퍼스종합건설계획(Campus Master Plan)과 관악 캠퍼스 건설 및 이전에 대해서는 제1부 공간에서 상세히 다루었다.

#### (1) 법령 제정과 기구 설립

1968년 4월 15일에 종합화의 기본 방침이 국가 정책으로 확정된 후, 종합10개년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같은 해 7월 19일에 법률 제2034호로 ‘서울대학교시설확충특별회계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령은 “서울대학교의 종합 발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목적에서 시설 확충 특별 회계의 관리, 재산, 세입, 세출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토지 매입비나 시설비가 부족할 때에는 이를 일반 회계의 전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였고, 회계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해의 세입에 이입하도록 하였다. 이어 1969년 11월 5일에 대통령령 제4201호에 의해 ‘서울대학교시설확충특별회계법시행령’이 공포되었다. 이 시행령은 시설 확충 특별 회계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매각 재산의 범위, 재산의 매각 등에 관한 협의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서울대학교는 종합10개년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는 한편 서울대학교의 특수한 학문적 위치를 감안하여 서울대학교의 법적 지위를 문교부 장관의 산하가 아닌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직속으로 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서울대학교를 ‘국립학교설치령’에서 분리하여 1970년 4월 8일에 대통령령 제4870호로 ‘서울대학교설치령’을 공포하는 데 그쳤다. ‘서울대학교시설확충특별회계법’이 캠퍼스종합건설계획을 예산과 재정의 면에서 지원하는 법규라면, 이 설치령은 종합화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기구를 개편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법령이었다. 이 설치령은 서울대학교 종합화 계획의 시행을 위한 총장 자문 기관으로 기획위원회를, 종합 건설을 계획하고 추진하기 위한 기구로 건설본부를 신설하는 등 대대적인 기구 개편의 내용을 담고 있다.

종합10개년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로는 국무총리 소속의 서울대학교종합계획추

진위원회와 서울대학교 산하의 기획위원회, 건설본부가 신설되었다. 우선 서울대학교 종합계획추진위원회는 1970년 5월 5일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종합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대통령령 제4980호로 설치한 이 위원회는 ① 기본 계획의 수립 및 조정, ② 재원의 확보 및 예산, ③ 종합 계획에 따른 제도 및 교육의 개선, ④ 종합 시설 계획의 수립 및 조정, ⑤ 기타 종합 계획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맡았다. 이 위원회는 위원장에 국무총리, 부위원장에 경제기획원 장관과 문교부 장관, 위원에 서울대학교 총장, 재무부 장관, 총무처 장관 등 모두 30명 이내로 구성하였다.

기획위원회는 서울대학교설치령 제22조에 의거하여 설치되었다. 기획위원회는 종합화 계획 시행에 관하여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기구로, 위원장에 부총장, 부위원장에 건설본부장, 위원으로는 각 처·국장과 대학원장, 각 학장, 교수, 기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 등 모두 21명 이내로 구성하였다. 1970년 5월에 학장회에서 기획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종합10개년계획의 추진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 기획위원회는 교육연구 및 기구조직계획과 캠퍼스종합건설계획을 포괄하는 종합10개년계획 추진의 최고 결정 기관으로서 그 산하에는 교육연구 및 기구조직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교육연구 및 기구조직분과위원회를, 그리고 캠퍼스종합건설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시설분과위원회를 두었다.

교육연구 및 기구조직분과위원회는 ① 종합 계획의 기본 방향, ② 기본 교육 및 연구 기구의 편성, ③ 기본 관리의 조직과 편성, ④ 학생 정원의 추정, ⑤ 교원 수급 계획, ⑥ 사무 직원 수급 계획, ⑦ 부대 시설 계획(도서관, 강당, 기숙사, 학생회관 기타), ⑧ 교과 과정 연구, ⑨ 입시 제도 연구, ⑩ 교수의 채용 및 승진 제도, ⑪ 예산 관리의 검토, ⑫ 학생 자치 활동의 문제, ⑬ 기타 교육 연구 및 기구 조직과 관련되는 중요 사항을 관장하였고, 교육연구 및 기구조직계획을 입안하였다.

시설분과위원회의 소관 업무는 ① 건물 및 각종 시설물의 규모 및 배치 계획, ② 환경 조성 및 도로 계획, ③ 상·하수도 계획, ④ 전기 시설 계획, ⑤ 냉·난방 및 위생 시설 계획, ⑥ 통신 시설 계획, ⑦ 소방 시설 계획, ⑧ 기본 설계의 작성, ⑨ 기타 종합 시설 계획과 관련되는 중요 사항이었고, 대부분 공과대학 교수로 구성하였다. 두 분과위원회에서 토의된 안건은 기획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였다.

캠퍼스 건설을 담당할 서울대학교 건설본부는 1970년 4월 8일에 서울대학교설치령 제19조에 의하여 신설되었다. 건설본부는 기획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종합 계획 중 캠퍼스종합건설계획을 시행하였다. 서울대학교 총장 산하에 설치된 이 건설본부의 본부장

은 별정직으로 하고 건설국과 건설통제실을 두도록 하였다. 건설국은 건설행정과, 건축과, 토목과 및 예비과로 구성되어 건설 업무를 분장하였고, 건설통제실은 캠퍼스종합건설계획의 발전 조정, 기본 설계, 설계 통제 및 시설 확충 특별 회계의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임무를 맡았다.

## (2) 투자 및 소요 자금

서울대학교는 종합10개년계획 추진을 위한 기구를 설립한 후 종합화 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하였다. 종합화 계획을 재정적인 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미 1968년에 서울대학교시설확충특별회계법을 제정하였는데, 이 법령은 캠퍼스 건설의 재원으로 서울대학교의 자체 재산을 매각한 대금과 정부 보조금인 일반 회계 전입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리하여 정부는 첫째, 의학계 및 농업계 캠퍼스를 제외한 서울대학교 국유 재산을 매각하고 부족한 재원은 정부에서 지원하도록 하며, 둘째, 정부 지원의 일부는 교육 차관으로 외자를 도입하여 교육 연구용 기계 기구와 도서를 연차적으로 확충·보강한다는 종합건설계획 재원 확보의 두 가지 원칙을 설정하였다. 이 원칙 하에 조정된 소요 자금의 조달 비율은 서울대학교 국유 재산을 매각한 대금 50%, 정부 지원 50%로 편성하였다. 정부 지원은 그 절반을 일반 회계 전입금으로, 나머지는 대외 원조 즉 차관 도입을 통해서 충당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캠퍼스 건설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를 정부 주요 사업의 하나로 책정하여 제3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에 반영시켰는데, 투자 계획과 자금 계획에 따르면 종합10개년 계획에 소요될 자금의 총규모는 1971회계연도 불변 가격으로 261억 5천만 원이며, 그것은 내자 조달액(재산 매각 수입과 일반 회계 전입금) 약 204억 6천 8백만 원과 외자 도입액 약 56억 8천 2백만 원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그 후 물가의 상승과 더불어 교육 차관이 대폭 증가하였기 때문에 3년 후인 1974년에 경제기획원은 총규모를 381억 원으로 재조정하였다.

내자 조달액은 1967년의 87억여 원에서, 1969년에 143억 9천 8백만 원으로, 캠퍼스 종합건설계획이 대체로 완성된 1971년에는 205억 2천 5백만 원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자금 계획을 수정한 1975년에는 307억 2천 2백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처음 계획한 87억 원의 4배 가까운 규모이다. 당초 계획보다 시설 투자가 확대되었고, 더불어 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었다. 외자의 경우는 1975년 말 현재 조정·확정



된 것에 따르면 국제개발협회(IDA) 차관, 일본 정부의 무상 원조, 대일 청구권 자금, 영국 정부 차관 등 총 규모가 118억 9천 6백만 원에 달하였다.

### (3) 교육연구 및 기구조직계획(Academic Plan)

종합화를 위한 교육 제도의 개혁은 교육연구 및 기구조직계획으로 수립되었다. 이 계획은 종합화 계획을 담당한 기획위원회 산하 기구인 교육연구 및 기구조직분과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다. 교육연구 및 기구조직분과위원회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연구 및 기구조직계획의 시안을 마련하였다. 제1차 시안은 1970년 7월에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제시한 기본 원칙과 방침은 이후에도 대체로 유지되어, 교육연구 및 기구조직계획의 큰 틀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1971년 10월 11일~15일에는 ‘대학 발전에 관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여 여러 외국 대학의 총장들에게 종합화 계획에 대한 조언을 들었고, 이를 바탕으로 1971년 12월에 최종 시안을 작성하였다. 이 최종 시안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받아 1973년 9월에 수정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다시 수정하여 1974년 12월 31일에 기획위원회가 작성한 서울대학교 종합화 계획의 최종안을 마련하였다. 이 최종안은 학장회와 평의원회의 인준을 거쳐 문교부에 송부되었고, 1975년 2월 25일 국무회의의 인준을 통과함으로써 정부의 공식적인 인가를 받았다.

『대학신문』 1975년 1월 13일자에 실린 「종합화계획 본교 측 최종안 요지」에서 제시된 종합화 계획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1. 연합대학적 성격을 탈피하고 명실상부한 종합대학교로서의 기구를 마련하며 종합적인 교육 운영을 하도록 한다.
2. 한국의 학문 연구와 고등 교육의 지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중추 대학으로 발전시킨다.
3. 국립대학의 성격을 견지하면서 점차적으로 정부의 간접 관리 체제로 전환하며 자율적인 운영을 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기본 원칙에 입각하여 종합화 계획은 “종합 캠퍼스의 건설, 기본 학문 및 그 연구 분야의 강조, 학부과정과 대학원과정의 종합 운영, 교수의 학문 영역별 통합 및 임용제도의 개선, 학문 계열별 학생 선발, 학사 행정과 교육 시설의 종합 관리”라는 방침 아래 추진되었다.

최종안 이전의 시안에서는 학내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로서 학무회의(1971년 시안부

터는 이사회로 변경)를 설치할 구상이었다. 학무회의는 국무총리(의장), 문교부 장관(부의장), 국회 문공분과위원장, 서울대학교 총장, 학술원장, 예술원장, 서울대학교 동창회장, 서울대학교 기성회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국무총리가 추천하는 경제계, 법조계, 문화계 인사 각 1명씩 3명, 총장이 추천하는 졸업생 대표 2명, 교수 평의원이 선출한 명예교수 1명, 전임(前任) 총장 1명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또 학무회의는 ① 총장 후보를 선출하여 전체 전임 교수의 동의를 구하고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권한, ② 총장이 선출한 수석 부총장 임명의 동의권, ③ 서울대학교의 기본 조직의 결정권(과·연구소 포함), ④ 서울대학교의 장기 계획 및 예산의 심의와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⑤ 기타 중요 정책의 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 학무회의에 참여하지 못하는 교수들의 의견 반영을 위해서는 계열별로 선출된 50명 내지 70명의 전임 교수로 구성되는 교수평의원을 신설하여, “전체 교수를 대표해서 교수 윤리와 교권의 옹호 및 서울대학교 학사상의 중대한 문제에 관한 협의 및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구상은 “대학본부 체제가 다층 다원화, 복잡할 뿐 아니라 학무회의 구성이 학외 인사로 다수 점유되어 관료주의적으로 되어 있다”는 비판이 많아 결국 실현되지 못하였다.

관리 기구는 소규모의 능률적인 조직을 지향하여 가능한 한 확대하지 않기로 하였다. 따라서 교무 담당 부총장(수석 부총장), 학생 담당 부총장, 대학원 및 연구 담당 부총장, 의약 캠퍼스 담당 부총장 등 4명의 부총장 직제를 신설할 것도 검토하였으나 최종안에서는 삭제되었다. 다만 관악 캠퍼스의 방대한 시설의 관리 유지를 위해 시설국만을 신설하기로 하였다.

한편 종합화 계획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다. 문리과대학의 고영복 교수는 “임명된 총장 밑에서도 제약된 범위 안에서나마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분권적 운영을 해 온……전통을 무시하고 하나의 조직과 규범 밑에 통합하려는 개편안은 분명히 대학의 획일제와 관료주의를 자초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서울대학교의 학문적 자치 단위는 학과이어야 한다. 학과 단위의 자치 기구 속에는 학생들의 참여가 권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행정상의 자치 단위는 학부 내지 대학이어야 한다. 대학 자치 기구의 체합체(體合體)가 바로 본부이어야 한다”(『대학신문』 1971년 10월 4일자)고 주장하였다. 또 상과대학의 강명규 교수도 “학외로부터의 관제성뿐만 아니라 학내의 상부에서 하부 기구에 대한 관료주의적 요소도 제거해야 된다는 점에서 본부의 편성은 필요한 최소의 조직으로 그쳐야 하며, 중요한 방침이나 학사의 흐름이 학과의 단계에서

상향으로 흐르고 상부에서 지령이나 명령으로 복종을 요구하는 하향적 흐름이 되어서는 안 된다”(『대학신문』 1971년 10월 11일자)면서 학과 또는 단과대학의 교수회에 궁극적으로 대학의 주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제 2 절 학문의 대학, 민족의 대학, 세계의 대학: 서울대학교 발전10개년계획

서울대학교는 1977년에 종합화 계획을 일단락한 후,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 하에 ‘서울대학교 발전10개년계획’ (1979년)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극심한 정치 격변 속에서 발전 계획도 변화를 거듭하였다. 1980년에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확립하기 위해 시도한 학사조정위원회의 ‘대학개혁구상’, 1980년에 ‘7·30 교육개혁조치’ 이후 대학의 급격한 변화를 수습하기 위해 마련된 ‘서울대학교 발전10개년계획’ (1983년) 등이 바로 그것이다.

### 1) 서울대학교 발전10개년계획(1979년)

1977년 4월, 기획위원회는 21명의 위원으로 전면 재편되었다. 여기에서 종합화 이후의 새로운 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작업이 시작되었고, 이를 위해 기획위원회 산하에 학사분과위원회와 시설분과위원회를 두었다.

이후 2년여의 논의를 거쳐 1979년 4월에 기획위원회의 연구보고서 형태로 서울대학교 발전10개년계획이 발표되었다. 이 계획안은 대학 발전의 기본 목표를 ‘학문의 대학, 민족의 대학, 세계의 대학’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이후 여러 발전 계획의 항구적인 지침이자 대학의 목적이 되었다. 또한 서울대학교를 학사과정 중심 대학에서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 전환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설정하고, 대학원과정에서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연계 운영, 학사과정의 집중 분야제 채택, 연구소의 종합 운영 등의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발전10개년계획의 개요를 각 부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교과 과정이다. 교과 과정은 교육의 중점을 대학원과정에 두고 학사과정과 대학원과정의 연계를 더욱 강화했다. 즉 대학원의 교과 과정(석·박사)을 먼저 편성하고 그것과의 연계 하에 학사과정의 교과 과정을 편성하도록 하였고, 학사과정의 교과목은 종래보다 훨씬 덜 세분화되고 교육 내용도 비교적 넓은 범위를 포괄하게 하여 기본적인 이론을 중심으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학사과정에 집중 분야제가 도입되기 때문에 학사과정의 교육 과정은 기본적인 내용에 더 치중하게 되었다. 집중 분야제는 하나의 특정 학문 분야를 집중 분야로 하여 그것과 관련된 분야의 교과목을 광범하게 이수토록 하는 것이었다. 즉 종래의 학과별 전공제에서 탈피하여, 학부에서는 기본 학문에 충실하게 하는 한편 대학원과정에서 전공 교과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려는 것이었다. 따라서 집중 분야제에서는 전공 소요 학점이 대폭 감축하여 학생들의 선택 범위가 넓어지며, 기존의 학과로 대표되는 학문 분야 외에도 몇 개의 학과가 공통으로 관련되는 문제 영역 과정도 개설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는 입시 부문이다. 학사과정의 학생 선발은 고등학교 교과 내용에 관한 시험에만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원자에게 매년 출제 위원들이 별도로 작성한 시험용 팜플렛(일반적 내용)을 읽게 한 뒤 그 내용에 관한 질문을 하여, 지원자가 답하게 하는 방향을 취하였다. 일부 학과에 한하여 특정 수준 이상의 예비고사 성적을 받은 고교생들을 학교장의 추천과 면접 고사를 통하여 입학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대학원과정의 학생 선발은 객관식의 입학 자격 고사(전공과 영어)를 거쳐 입학 자격이 인정된 지원자에 한하여 학사과정 성적, 면접 및 지도 교수의 추천으로 입학생을 선발하도록 하였다. 대학원에 입학한 학생은 2개 학기를 이수하면 박사과정 자격시험을 거쳐 박사과정 학생으로 인정되었다. 단 타 대학 석사과정 출신은 이 자격시험에 합격함으로써 서울대학교 박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었다. 박사과정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 또는 그 시험에 불합격한 학생은 대학원 입학 후 3개 학기를 마치고 석사과정 종합시험에 통과한 뒤 석사학위논문 또는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석사학위를 받고, 박사과정 자격시험에 합격한 뒤 3개 학기를 연속적으로 이수한 학생은 박사학위 종합시험을 거쳐 학위논문 제출 자격을 얻도록 하였다.

세 번째, 대학원 교과목은 단기간 집중적으로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학생들이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일을 하지 않고 대학원과정에만 전념하도록 하는 '전임 수업'을 철저히 실시하도록 하였다. 대학원생은 교육 과정의 한 부분으로 연구소의 연구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또한 대학원에는 학문적 필요에 따라 관련 학문 사이의 '협

동 학위 과정'을 설치하고 연구소를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학부과정을 보면, 집중 분야제 하에서 학부생들은 입학하여 4개 학기를 이수한 뒤에 집중 분야를 선택하여 교과목을 이수하도록 하였다. 이 제도 하에서 학생들은 대학에 소속되거나 관련 학과들을 통합한 단위인 학부에 소속된다.

네 번째, 교육 조직에 관해서는 일반 대학원과 전문 대학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대학원 조직을 일원화시키도록 하였다. 즉 이들을 동일한 관리 체계에 포함시켰다. 그 외의 대학 조직은 그대로 두었다.

다섯 번째, 연구소의 조직과 운영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구소들을 분야별로 통합하여 대단위 종합 연구소로 발전시키도록 하였다. 이 일은 연구소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 과정에서 점진적이고도 자연스럽게 추진하기로 하였다. 종합 연구소에는 각각 행정실과 기획조정실을 두고 전임 연구 교수와 전임 연구원 및 사무 요원을 배치하고, 연구 교수와 연구원은 연구비 재원 확보, 연구 진행 및 자료의 처리 분석, 산하 연구실의 기능 조정 등의 기능을 분담하도록 하였다. 종합 연구소는 각각 도서실, 자료 은행, 자료 교환실, 전자 계산 터미널을 갖추도록 하였다. 또 대학원 건물과 가까운 곳에 두어서 학생들의 교육과 연구가 쉽게 연결될 수 있게 하였다.

여섯 번째, 교수의 교육과 연구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교수 요원을 대폭 증원하도록 하였다. 교수 채용의 특수한 방안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교수직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학위후과정을 겸하여 일정 기간 동안 계약을 통해 전임 강사로서 가르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기간은 교수의 직전 교육(職前教育)의 의미를 가졌다.

일곱 번째, 학생 지도는 궁극적으로 기숙사 제도를 강화하여 기숙사 중심으로 학사과정 학생을 지도하도록 하였고, 이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현재의 분담 지도제를 학문 중심 체제로 전환, 강화하도록 하였다. 대학원생에게는 장학금과 병역상의 우대 조치 등을 주어 우수한 학생들을 교수직과 연구직에 종사하도록 유도하려 하였다.

이와 같은 서울대학교 발전10개년계획은 확정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안이라는 성격이 강하였다.

## 2) 학사조정위원회의 대학개혁구상

서울대학교 발전10개년계획을 구체화하지 못한 가운데 1979년 10·26 사태가 발생

하자 대학은 커다란 정치 변동 속에서 자율화의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대학 개혁의 자율적 논의를 봉쇄했던 유신체제가 종말을 고하자, 대학에서는 자율적으로 대학 체제를 개편하고자 하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서울대학교는 이를 수렴할 기구로 1979년 12월에 학사조정위원회를 총장의 비상설 자문 기관으로 설치하였다.

학사조정위원회는 대학 본연의 자세를 재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교권 확립, 학원의 자율적 발전에 관련하여 학칙 개정 등을 포함한 제반 문제를 연구 검토하였다. 그 결과 학사조정위원회가 발표한 대학개혁구상은 다음과 같다.

### 1. 대학의 발전-대학 본연의 자세 재정립

#### 1) 학문과 대학의 자유

- ㉠ 대학에서의 연구·연구 결과 발표·교육의 자유는 보다 더 넓게 보장되어야 한다.
- ㉡ 대학에서의 연구와 교수 내용의 독립성은 보장되어야 한다.
- ㉢ 대학에서의 인사와 시설 및 학생 관리에 대한 자치권은 신장되어야 한다.

#### 2) 대학 민주화

- ㉠ 대학의 분권화.
- ㉡ 대학행정개혁위원회의 설치.
- ㉢ 학칙의 개정 및 적용위원회 설치.

### 2. 교수의 기능-교권의 확립

#### 1) 교권의 확립

- ㉠ 교수회의 활성화.
- ㉡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
- ㉢ 인사 행정의 자율성.

#### 2) 교수회의 활성화

- ㉠ 대학의 운영은 교수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 교수회는 교육, 연구, 학생 지도에 관한 의견 집약체이다.
- ㉢ 각 대학(원) 교수회는 학내 인사 위원회의 선출, 총장의 학(원)장 임명 제청에 대한 동의에 관한 심의권을 갖는다.
- ㉣ 각 대학(원) 교수회는 전임 교수 1/3 이상의 요구에 의해서도 소집될 수 있게 한다.
- ㉤ 각 대학(원) 교수회에서 학과 교수회의 심의, 의결 사항을 결정한다.
- ㉥ 교수회의 의결 사항을 학칙에 명시한다.
- ㉦ 학과 교수회를 학칙에 규정한다.
- ㉧ 교수의 의견 집약체로서 전체 교수회 또는 각 대학(원)의 대표로서 구성되는 교수평의회를 학칙 상에 둔다.

- 3) 교수 재임명 제도
    - ㉗ 현행 제도는 폐지한다.
    - ㉘ 전임 강사 이상 정교수에 이르기까지 신규로 채용하는 사람은 처음 3년 간은 계약 기간으로 하고, 재임용되면 정년 시까지 신분을 보장한다.
  - 4) 정원 외 입학 제도: 외교관의 자녀 또는 동일계(기술계), 특기 소유자 등의 정원 외 입학 제도는 폐지한다.
  - 5) 교수의 사회봉사와 겸직
    - ㉗ 교수의 사회봉사 활동은 연구, 교육, 학생 지도보다 앞설 수 없다.
    - ㉘ 교수로서의 정상적 기능을 수행하기에 지장을 초래하는 겸직은 허용될 수 없다.
  - 6) 교수의 복직 문제: 근래 정치적인 이유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대학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교수들은 전원 복직되어야 한다.
3. 학생 자치 활동-자율과 책임
- 1) 학내 학생 자치 활동의 자율성과 책임: 학내 학생 자치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이에 대한 교수들의 교육적 지도를 받아야 한다. 또한 자치 기구는 학칙상 기구로 규정되어 총장, 학장은 회칙의 승인권력을 갖는다.
  - 2) 학도호국단과 학생 자치 기구
    - ㉗ 학도호국단의 성격상 학생 비상 동원 체제로서 국방적 차원에서 존속시킨다.
    - ㉘ 긴급 학생 비상 체제와 순수한 학생 자치 활동 기구는 분리한다. 즉 전자는 국가방위법규상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재편성하며, 후자는 학생회를 부활하여 학생들의 자유롭고 자율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한다.
  - 3) 학생 자치 기구
    - ㉗ 각 대학별 특수성에 따른 자율성을 부여한다.
    - ㉘ 학생 자치 활동 기구를 학칙상 기구로 규정하며, 총(학)장이 회칙 승인, 간부 인준권을 가지며, 교수들이 교육적 지도 의무를 진다.
  - 4) 학생 단체 활동
    - ㉗ 서클 활동은 자율성, 건전성, 교육성이 견지되어야 한다.
    - ㉘ 서클의 조직은 등록해야 하며, 서클 집회는 사전 신고되어야 한다.
    - ㉙ 지도 교수제는 교육상 필요할 경우 자율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둔다.
4. 학내 언론-자유와 한계
- 1) 학내 언론 자유의 보장과 한계.
    - ㉗ 학내 언론에 있어서 학원과 학생의 자율권의 신장.
    - ㉘ 학내 언론에 대한 규제는 일반 사회의 법규에 준하며, 교수들의 학문적 권위에 의한 교육적 지도를 포함한다.
  - 2) 대학 신문: (생략)

- 3) 학내 간행물: (생략)
- 4) 집회 등 표현 행위
  - ㉠ 집회 허가제를 요허가 집회와 요신고 집회로 구분한다.
  - ㉡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어떠한 행위도 금지한다.
  - ㉢ 집회나 시위 자유 지역을 설정할 수 있다.
- 5) 정치 활동
  - ㉠ 정당 등 정치적 단체 가입은 현행대로 금지한다.
  - ㉡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치적 행위를 금지한다.
- 5. 학생 지도-교육성과 인간성
  - 1) 학생 지도의 교육성
    - ㉠ 학생의 학문과 인격의 성장을 위하여 지도한다
    - ㉡ 교수와 학생의 인격적 관계 위에서 지도되어야 한다.
    - ㉢ 학생 스스로의 자발적 행위로서 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 2) 학생 분담 지도제는 폐지한다.
  - 3) 학생 지도 교수제
    - ㉠ 지도 내용은 논문, 학과 선택, 장학금 신청 등 학업 전반에 걸친다.
    - ㉡ 학생 스스로의 자발적 행위로서 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 4) 학생 활동 지도를 위해 협의 기구를 설치한다. 이 기구는 학생 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와 자문을 하며, 학생들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다.
  - 5) 지도 휴학제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며, 요건을 '질병'만으로 한정하여 존속시킬 수 있다.
  - 6) 학생 포상과 징계 제도
    - ㉠ 학생에 대한 상벌은 교수회의의 심의 내지 의결을 거쳐서 행한다.
    - ㉡ 학생 징계에 대한 재심 절차를 둔다.
    - ㉢ 학생 상벌에 관한 제도와 방침을 심의하는 학생상벌위원회를 설치한다.
    - ㉣ 총장의 징계권(금지 활동을 위반한 경우 총장은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징계할 수 있다)을 폐지한다.
    - ㉤ 상담지도관실을 폐지한다.

이상과 같이 학사조정위원회의 구상은 대학 발전을 위한 장기적 구상이라기보다는 1980년 초에 학내에서 문제가 된 사안을 중심으로 짠 것이었다. 또한 “이번 조정안은 학생의 능력에 대한 철저한 불신감을 배경으로 하여, 교수와 학생이 한 공동체의 동등한 구성원이 아니라 상하 관계로 이어지는 지배 관계라는 잠재의식 속에서 작성된 것임을 보여 주는 여러 가지 규정은 학원의 민주화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것”(『대학신



문』 1980년 2월 25일자)이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당시 학생들은 이 안이 너무 교수 위주로 편성되었다고 비판하였다.

### 3) 서울대학교 발전10개년계획(1983년)

종합화 이후 진행되었던 서울대학교의 자율적인 대학 개혁 논의는 1980년의 5·17 쿠데타로 인해 무산되어 대학 개혁에 전혀 반영되지 못하였다. 이후 대학 개혁은 대학 구성원의 손을 벗어나 문교부 관료가 주도하였고, 대학 발전 계획은 정부의 7·30 교육 개혁조치에 따른 졸업 정원제 실시 등으로 인해 그 좌표를 상실하였다. 졸업 정원제 시행으로 인한 대학 학부 정원의 증가는 그 동안 발전 계획에서 핵심 과제로 내세웠던 대학원 중심 대학의 지향과 거리가 먼 것이었다.

1983년에 서울대학교는 1970년대 후반의 대학 발전 방향을 재확인하면서 다시 새로운 발전 계획을 구상하였다. 이는 서울대학교가 지도적인 대학으로서 사명을 다하기 위한 것으로, 졸업 정원제 시행 결과 빚어진 급격한 양적 팽창을 질적 향상으로 대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였다.

서울대학교는 우선 계획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광범한 기초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기초 조사는 각 단과대학, 학과 및 연구소 등 교내 모든 단위 기관에 ‘발전계획작성지침’을 배부하여 이를 취합하는 상향식 형태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1983년 12월에 ‘서울대학교 발전10개년계획’을 연구 보고서 형태로 발표하였다. 이것은 기획위원회의 전문위원회가 1983년 7월부터 집중 작업을 통해 마련한 것이었다. 이 계획안은 ‘서울대학교 종합10개년계획’에서 설정한 큰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그동안 작성된 각종 보고서와 각 단과대학의 기획 요구 사항, 그리고 외국 대학의 선례 등을 참고로 하였다. 연구 보고서는 먼저 그 기본 원칙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1. 서울대학교 발전 계획의 이념과 목표는 어디까지나 국가 사회가 요구하는 기본적 임무를 수행하는 데 그 바탕을 둔다. 이 기본적 목표는 어떠한 어려운 상황 하에서도 결코 소홀히 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것임을 재확인한다.
2. 국내외의 제반 제약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것을 제시토록 한다. 항상 가

- 용 자원의 제약을 인식하고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도모한다.
3. 서울대학교의 역사를 통하여 정착이 되고 또한 원활하게 기능하는 모든 조직, 기구를 포함한 제도, 시설 등은 이를 가급적 존중토록 한다. 이들 전통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며 나아가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는 길이므로 그와 같은 방향을 지향한다.
  4. 서울대학교의 자체 역량의 배양과 활용에 최대한의 역점을 두며 이 계획을 통하여 서울대학교의 연구, 교육 및 사회봉사의 역량을 질 양 양면에서 현저히 높이도록 노력한다.
  5. 시대적 변천과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대학의 자율화, 자유화 그리고 개방화를 지향한다. 대학은 아카데미즘을 고수하되 사회로부터 고립된 존재로 남아 있을 수는 없다. 대학 자체의 자율화 및 자유화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할 뿐 아니라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대학 내의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최대한 개방토록 한다.
  6. 발전 계획에서는 단위 기관(대학원, 연구소 등)의 요구 사항을 최대한 반영토록 한다. 즉 단위 기관의 개별적 기능의 특수성을 존중하기 위하여 각 단위 기관별 개선 요구 사항은 사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반영토록 한다.
  7. 기구의 신설 또는 확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가능한 한 억제토록 한다. 끊임없이 변화 발전하는 학문과 교육의 필요에 따라 특별한 경우에는 새로운 기구나 제도의 신설 및 확장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설 및 확장을 적극 억제하며 오히려 중복 또는 유사 기구의 통합 축소를 유도하도록 하고 기존 기구의 범위 내에서 재정비토록 유도한다.

발전 계획의 목표는 첫째, 국내 최고의 학술 연구 및 교육 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인적·물적 시설의 완비, 둘째, 학문의 대학, 민족의 대학, 세계의 대학을 지향하기 위한 제 방안의 강구, 셋째, 대학원 중심 대학의 지향으로 설정하였다. 발전 계획이 지향하는 서울대학교상(像)인 학문의 대학, 민족의 대학, 세계의 대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문의 대학: 학문의 자유 보장, 연구 기능에 최대한 역점, 대학원 교육 강화, 기초 학문 분야의 탁월성 유지.
2. 민족의 대학: 한국의 문화적 전통을 바탕으로 하여 세계 문화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독창적인 학문을 개발·정립, 국가 발전에 적극 기여하는 교육·연구 및 사회봉사 기능을 담당, 국내 타 대학 및 연구 기관과의 유대를 강화하며 학문 발전의 선도적 역할 담당, 사명감과 주체 의식이 투철한 전인적 인재의 교육을 지향.
3. 세계의 대학: 학문 연구를 세계적 수준으로 제고·유지, 세계의 우수한 대학 및 연구 기관과의 국제 교류를 증진.

연구 보고서는 이처럼 발전 계획의 기본 원칙과 목표를 제시함과 동시에 교육 조직에서부터 재정 부문에 이르기까지 170여 개의 계획 항목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를 동시에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다시 이를 간추려 40개의 전략적 발전 과제를 설정하였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학부 정원을 동결하고 대학원 정원을 증원하여 대학원생 대 학부생의 비율을 1:3 정도로 하고자 하였다. 또 조기 졸업 제도를 실시하고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연계 운영하도록 하였다. 교수 부문에서는 정기적인 연구 교수 제도를 시행하고 교수의 업적 증진을 위해 책임 시간을 단축할 것을 제시하였다. 행정 부문에서는 기획실을 신설하고 단순 관리 업무의 민간 위탁을 확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안은 기획위원회 전체 회의와 학장회 심의 등을 거쳐서 확정된 것이 아니었고, 정부 당국과 협의된 것도 아니었다. 이것이 공식적인 발전 계획이 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심의와 협의, 그리고 의견 수렴을 통해 수정, 보완되어야 했지만 이 안은 결국 무산되었다. 이로써 서울대학교 종합10개년계획이 끝난 1977년 이후 ‘서울대학교 발전장기계획’이 나오는 1987년까지 10년 동안 서울대학교의 자체적인 발전 계획은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만다.

### 제 3 절 국제 수준의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의 발전: 서울대학교 발전장기계획(1987년)

이 시기 논의된 교육 개혁의 방향은 첫째, 대학원 교육 강화와 학부제 도입, 둘째, 대학의 자율화와 민주화 등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1987년 발표한 ‘서울대학교 발전장기계획’ (1987~2001년)의 수립 경위와 내용을 살펴보고, 이후 학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발전 계획을 수정해가는 과정을 ‘서울대학교 2000년대 미래상’ (1995년)과 ‘서울대학교 장기발전구상’ (1998년)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 1) 서울대학교 발전장기계획의 수립 경위

1980년대 중반 학내외에서 서울대학교의 포괄적인 발전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유는 첫째, 서울대학교 종합10개년계획(1968~1977년)에 의해 종합화 작업을 완료한 지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 계획을 잇는 장기적인 발전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점 때문이었다. 둘째로 종합화 이후 장기적인 발전을 수립하려고 시도한 바 있으나 1979년과 1983년의 두 차례에 걸쳐 서울대학교 발전 10개년계획 연구보고서의 작성만으로 끝났기 때문이다. 셋째, 서울대학교의 장기적인 발전뿐 아니라 우리나라 대학의 전반적인 발전에 대한 지침이 될 수 있는 장기 계획의 작성과 시행에 대한 학내외의 요구가 점점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대학교는 1985년 7월에 박봉식 총장이 취임한 후, 기획실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작업을 시작하였다. 1985년 9월 17일에 발전 계획의 수립 작업을 담당하기 위하여 기획실장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발전계획전문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아울러 1986년 5월 30일에는 캠퍼스 부문의 발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발전계획캠퍼스부분전문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전문위원회는 대학(원) 및 부속 기관별 협의 위원으로부터 각 대학(원) 및 부속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교수 및 직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1985년 10월부터 1년간 ‘발전 계획 포럼’을 운영하면서 교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또 ‘대학 발전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공개 토론을 가졌다. ‘대학 발전 심포지엄’은 1985년 9월부터 1986년 3월까지 서울대학교의 장기적인 발전 계획의 기본 전제, 연구 활동 진흥 방안, 대학원과정 교육에 대한 강화 방안, 학사과정 교육 및 학생 과외 활동의 개선 방안, 대학 행정 및 재정 합리화 방안 등에 대하여 5회에 걸쳐 개최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1986년 7월 18일에 ‘서울대학교 발전장기계획 전문위원회 초안’이 마련되었다. 전문위원회안은 1986년 9월 17일에 각 대학 교수 전원에게 배부되었고, 9월 23일부터 26일까지 대학별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전문위원회안에 대한 대학별 이의 사항이 기획위원회에 상정되었다.

이어 1986년 9월 29일, 30일 및 12월 31일에 열린 학장회에서 각 대학별 교수회가 제출한 이의 사항과 기획위원회가 제출한 이의 사항을 심의한 뒤 ‘서울대학교 발전장기계획’(1987~2001년)을 확정하였다. 이 발전 계획은 비록 정부의 공식적인 계획안으로 채택, 승인되는 절차를 밟지 못하여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학내에서는 공식적인 발전 계획으로 인정받았다.

## 2) 서울대학교 발전장기계획의 내용

발전장기계획의 목표는 ① 이론 및 기술 개발의 능력을 획기적으로 신장하고, ② 응용 연구의 능력을 확대하며, ③ 고급 전문 인력의 양성과 이들의 재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④ 인간 교육의 능력을 최대한 신장시킴으로써, 서울대학교를 ‘국제 수준의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 발전시키는 것이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목표 연도인 2001년에는 본교의 학문 분야 중 50%의 분야에서 미국의 해당 분야 상위 10~20위권 대학에 필적하는 연구 업적을 산출하고, 이들 대학 수준에 버금가는 박사급 인력을 양성하며, 본교의 모든 교육 분야에서 고급화되어 가는 우리 사회의 중견 인력 수요에 부응하는 학사급 인력을 배출하고,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정된 분위기에서 인격과 정서를 함양함으로써 민주 시민의 역량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발전장기계획은 서울대학교를 ‘국제 수준의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 발전시킨다는 목표 하에, 연구 활동의 진작, 대학원과정 교육의 강화, 학부과정 교육의 개선, 학생 과외 생활의 향상 등의 중심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대학 조직의 개편, 학사 제도의 개선, 대학 행정·재정의 효율화, 캠퍼스의 합리화 등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이하에서는 발전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차례로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먼저 다음은 대학 조직의 개편에 관련한 부분이다.

1. 대학의 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사과정 학생의 입학 정원을 향후 5년 간 매년 200명씩 감축하고, 전문 인력 수요의 고급화에 부응하여 1992년부터 의과대학을 대학원과정으로 전환하고, 법과대학과 수의과대학에 2년의 예과 과정과 3년 및 4년의 본과 과정을 도입하며, 1997년부터는 치과대학을 대학원과정으로 전환하는 등 학제의 개편을 단행한다.
2. 대학의 연구 기능을 확대하고 대학원과정 교육을 강화하며 학사과정 교육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 학생 과외 생활의 충실한 지도를 도모하기 위하여, 향후 15년 간 교수 정원을 1986년 1,334명으로부터 연평균 40명씩 늘리어 2001년에는 1,934명이 되게 하고, 교수 대 학생 비율을 1986년의 1:20.2에서 2001년에는 1:11.7이 되게 한다.
3. 교수의 연구 및 교육 활동과 학생들의 과외 생활을 원활하게 지원하고 연구 및 교육 지원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향후 15년 간 직원 정원을 매년 30명씩 늘리어 직원 정원이 1986년 1,483명으로부터 2001년에는 1,934명이 되게 하고, 교수 대 직원 비율이 1986년 현재의 1:1.1 수준을 유지하게 한다.

4. 학사과정의 대형 강의에 분반제를 도입하고 이를 대학원과정 상급반인 조교가 담당함으로써 교수의 강의 부담을 완화하고, 대학원과정 학생에게 교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조교 정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교수의 연구 및 교육 활동을 보조하고 대학원과정 학생의 면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수 정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한다.
5. 대학원과정의 교육을 강화하고 각 학과가 대학원과정 중심으로 운영되게 하기 위하여 대학원과정 학생은 모두 학과에 소속되게 한다.
6. 학과의 지나친 세분화로 학사과정의 전공 교육이 파행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경우를 시정하기 위하여, 학문적 연관성이 높은 학과들을 묶어 학부를 설치한다.
7. 연구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연구소가 대학 소속으로 전환되게 권장하고, 자체 예산으로 박사후과정 연구원으로 연구 전임 교수를 둘 수 있게 하며, 활동 업적을 평가하여 부실한 연구소는 폐지한다.
8.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 소재와 건전한 문화 및 체육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상담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학생 과외 활동을 풍요롭게 만드는 기능을 담당하는 생활 교육 기관으로서 대학문화원을 설립한다.
9. 연구 활동에 대한 대학본부의 행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무처의 연구 지원 기능을 분리하여 연구처를 설치하고, 연구 기회의 발굴 및 연구 여건의 조성, 연구 결과의 평가에 대한 행정 업무, 연구비의 중앙 관리 등을 담당하게 한다.
10. 도서관의 장서 충수, 전문 사서, 기자재 등을 확충하여, 도서관의 종합적인 수준을 향상시키고, 문헌자료종합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며, 도서분관 제도를 확대해 나간다.
11. 전자계산소의 전자 계산 능력을 확충하고, 본교 전자계산소를 중심으로 한 전국 대학 간의 네트워크를 확대해 간다.
12. 자연계의 각 학문 분야별로 연구지원소를 설치하고 이들을 조정 연결하는 연구기구센터를 설치하며, 서울대학교 학술연구재단과 서울대학교 장학회를 서울대학교 연구장학재단으로 통합하고, 보건 진료소의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고, 대학홍보센터를 설치하여 대학 생활의 정보 제공 및 대학 활동의 대외 홍보를 강화한다.

보는 바와 같이, 대학 조직 개편의 방향은 연구 중심 대학 또는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의 개편을 위한 것이다. 대학의 기능을 연구 중심으로 바꾸기 위하여 제반 학생 제도와 시설을 보충하는 것과 더불어, 대학원 정원의 증원, 교수의 증원, 교수의 연구 여건의 개선, 조교·조수 정원의 증원, 학과 통폐합을 통한 학부제의 실시, 연구소 및 기타 연구 지원 시설의 확충 및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음은 연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학사 제도의 개선 부분이다.

1. 교수의 과중한 강의 부담을 줄이고 연구에 바칠 수 있는 시간을 확대하기 위하여 강의 책임 시간을 축소한다.
2. 교수들이 강의 부담 없이 일정 기간 동안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재의 연구 교수 제도, 해외 장기 출장 교수 제도 및 해외 파견·휴직 교수 제도 등을 단계별로 통합하여 연구년 제도를 정립해 간다.
3. 경쟁적인 연구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연구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연구 실적 심사 규정을 제정하여 연구 평가 결과가 교수의 임용, 승진, 연구비 배정 등에 엄밀히 반영되게 하고, 교수 연구 업적물의 요약집을 매년 발간하고, 서울대학교 학술상을 도입하며, 석좌 교수 제도를 도입한다.
4. 학문 분야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모든 교수들에게 연구비를 지급하는 기본 연구 경비 제도를 도입하고, 기본 연구 경비로써 완수할 수 없는 대형 연구 과제에 대해서는 경쟁적인 선발에 의해 부가 연구 경비를 지원하며, 모든 신규 채용 교수에게 연구 착수를 위한 기자재 확보를 위하여 연구비를 지급하는 연구 착수 경비 제도를 도입하며, 제반 연구 경비를 연구처가 중앙 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5. 국제 학술 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교환 교수의 정원과 국제 학술 회의 참가 및 개최에 대한 지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가며, 인문사회계의 2~3개 분야를 경쟁적으로 선정하여 국제 수준의 정기 학술지가 육성되도록 중점 지원한다.
6. 연구 기기의 신규 구입을 연차적으로 확충하고 보수 유지비의 정율화 제도를 도입하고, 신규 기기에 대한 감가상각 제도를 도입한다.

연구와 관련된 학사 제도의 개선 방향은 주로 교수들의 연구 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과중한 수업 부담을 줄이고, 연구비를 증액하며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연구년제를 실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연구 기기의 도입과 보수 등을 강조하였다.

다음은 대학원과정의 교육 기관 관련 학사 제도 개선 부분이다.

1. 대학원과정 학생들의 지속적인 연구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하여, 박사과정의 입학시험을 자율화하여 학부 또는 대학의 특성에 따라 박사과정 진입 요건을 정하도록 하고 신입생 선발 기준도 다양화하여 각 학부 및 대학이 선발권을 갖도록 한다.
2. 대학원과정 학생이 최소한의 필요한 기간 동안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취업을 금지하는 전임 등록제를 도입하며, 국내외의 타 대학과의 연구 및 교육 활동의 교류를 촉진하고 특수 분야의 타교 교수와의 학문적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타교의 대학원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하는 학점 이전제를 도입하고, 과정 수료 후

의 대학원 학생들의 논문 지도와 학교 시설 이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학위 취득 시까지 등록을 의무화하는 연구 등록제를 도입한다.

3. 교수 및 대학원과정 학생들의 연구 활동이 보다 창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학원과정의 이수 학점, 교과목 나열 및 개설,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의 내용 등에 대한 획일적인 제한을 철폐하고 학부 및 대학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다.
4.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에 대처하면서 학문 학위의 질적 저하를 막기 위하여 기초 학문 분야를 제외한 전문 학문 분야의 대학원과정에서 논문 제출의 면제와 이수 교과목의 확대 등 학위 취득 요건을 학문 학위와 달리하는 전문 학위 제도를 도입하여 학문 학위와 병행할 수 있게 한다.

대학원과정 교육 기관의 학사 제도 개선 방향은 주로 대학원생들의 생계를 일정 부분 보장함으로써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각 학과나 학부, 단과대학의 특성에 맞추어 대학원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하고, 학위 제도를 이원화할 것과 학문 학위와는 다른 전문 학위 제도를 신설하여 학문의 특성에 따라 특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학사과정 교육 기관의 학사 제도와 관련한 개선은 다음과 같다.

1. 학사과정의 신입생을 각 학부 및 대학의 특성에 맞도록 선발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신입생 선발 기준을 다양화하고 선발권을 학부 및 대학이 갖도록 한다.
2. 교양 교육의 강화를 위하여 중핵 교과 영역의 세부 과목을 더욱 다양하게 개발하여 한국사, 국민윤리 및 개론 과목들을 단계적으로 대체해 나간다.
3. 교수의 강의 부담을 줄이면서 학사과정 교육의 효과를 유지하기 위하여 학사과정의 저학년 전공 교과목에 대형 강의를 확대하고 교수가 직접 담당하는 대단위 강의와 20명 단위로 조교가 지도하는 분반 강의를 병행하는 분반제를 도입한다.
4. 교수와 학생 간의 학문적인 관계를 기초로 하지 않는 현재의 분담 지도제를 개선하고 바람직한 사제 관계 및 선후배 관계를 형성하면서 특정 과제에 대하여 심도 있고 창의적인 학습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수, 조수 및 학사과정 각 학년 학생으로써 분담 세미나를 구성하고 학생은 원칙적으로 졸업까지 같은 분담 세미나에 속하면서 세미나식 강의를 실시하는 분담 세미나제를 도입한다.
5. 재직 교수의 자발적인 교육 기술 향상을 위하여 교육방법개선센터에서 강의 실태의 녹화 분석 및 강의에 대한 학생의 반응 조사용 설문지의 공급 등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6. 학사과정 학생에 대한 무상 장학금은 가능한 한 축소하고 대여 장학금을 대폭 확대하며, 봉사 장학금 제도의 재원을 실제 학생 근로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 배정하여 학생들의 실제 근로에 대한 보수로 지급되도록 봉사 장학금 제도를 학생 근무 제도로 전환한다.

학사 관련 부분의 개선 방향은 강의의 질을 높이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외에 신입생 선발, 강의 평가, 학사과정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등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교수들의 강의 여건 및 강의 방식 개선과 함께, 학생과 교수 관계를 연구 중심으로 바꾸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학생의 과외 생활에 관련한 학사 제도의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생회가 대학 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의사를 대변하고 학생들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는 기구로서 역할하도록 적극 육성하며, 운영 경비는 학생 자율 경비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학생들의 건전한 서클 활동을 적극 조장하기 위하여, 서클 등록 요건을 완화하고 서클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3. 학생들의 정서 함양과 문화 의식의 제고를 위하여, 대학문화원의 주관으로 문화 기획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체육 활동을 적극 조장하며 미술 전시를 상설화하는 등 문화 체육 소재를 적극 공급한다.
4. 학생들이 과외 생활에서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고 낭만을 즐길 수 있도록 캠퍼스 주변에 대학촌이 조성되게 하기 위하여 간접적인 조성책을 강구한다.
5. 학생들의 과외 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기숙사 운영에 있어 학예 프로그램의 확대, 편익 시설의 확충, 과외 학업 지도제의 실시 등으로 기숙사를 생활공간으로 발전시키면서 기숙사 수용률을 높여 나간다.

학생의 과외활동에 관련하여 제시된 개선 방안은 가능한 한 학생들의 과외활동을 학교가 통제하는 방향으로 계획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학생들의 과외 생활이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적인 여건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것이었다. 한편, “체육 활동의 적극 조장” 등의 개선 방안은 후술하는 캠퍼스 합리화 방안과 서로 배치되는 측면도 가지고 있었다. 즉, 캠퍼스 합리화 방안은 주로 교육, 연구 시설 확충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고, 이후 많은 건물들이 신축되었는데, 이러한 신축 건물들 중 일부는 기존에 체육 활동 공간이었던 곳에 세워진 반면 새로운 체육 활동 공간은 마련되지 않았다.

다음은 대학의 행정과 재정의 효율화를 위한 내용이다.

1. 대학의 발전과 운영에 대한 외부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현재 교육법과 학칙에는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운영되지 않고 있는 평의원회를 구성하여 대학의 발전 방향과 지원 획득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운영한다.
2. 총장에 대한 최고 자문 기구인 기획위원회의 정기적 개최를 실시하여 발전 계획의 집행, 예산의 편성과 집행, 연차별 대학 운영 계획과 평가, 제반 제도 및 규정의 개선안 심의 등 기획 기능을 강화하며, 대학본부의 각 처·실·국의 업무에 대한 교수들의 참여와 자문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 과마다 자문위원회를 두어 위원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한다.
3. 교수들의 안정적인 연구 및 교육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의 교수 재임용 제도는 조교수까지만 적용하고 부교수부터는 특별한 징계 사유가 없는 한 정년까지 신분이 보장되는 정년 보장 제도로 전환한다.
4. 대학의 연구 및 교육 기능에 대한 행정 지원을 전문화하기 위하여, 교육 행정직류 중에 대학 행정직(가칭)을 하위 영역으로 설치하여 전문 인력을 확보하며, 행정 직원에 대한 연수를 강화해 나간다.
5. 학부 및 대학 중심의 대학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 대학본부에 집중되어 있는 행정권 및 업무를 학부 및 대학에 적절히 분산한다.
6. 발전 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부가 서울대학교를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 지정하도록 추진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법'의 제정을 추진하며, 서울대학교의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의 개편 방향, 지원 기준의 강화, 행·재정상의 자율성 확대 등이 명시되도록 한다.
7. 서울대학교의 운영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학원과정의 운영비 책정을 높게 책정하며, 기성회비의 책정은 기성회가 기성회비 징수안을 만들어 정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수업료는 모든 등록 학생이 일률적으로 균등 납부케 하고 학점 단위당 기성회비를 학부 및 대학별로 그리고 학위 종류별로 차등 책정하여 등록 학점 수에 따라 납부케 한다.
8. 발전 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정부의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부문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학 발전 기금'을 조성한다.
9. 대학 재정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입 대체 경비 제도의 적용을 받는 경비의 범위를 확대하고, 대학교 예산의 항목 간 전용권을 총장이 위임받도록 한다.
10. 학부 및 대학의 재정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학 예산 중 인건비와 시설비는 대학본부에서 전교 분을 책정 집행하되, 운영비는 각 학부 및 대학별로 소요를 측정하고 이를 기성회비 책정에 반영하여 조달 집행하는 준독립 재산제를 도입한다.
11. 발전 계획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하여, 현행의 품목별 예산 제도와 병행하여 계획 예산 제도를 도입 실시한다.

대학 행정과 재정 부분 역시 연구 중심 대학으로의 변화에 맞추어 계획을 입안하였다. 이에 따라 학부 및 단과대학으로 행정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키는 방안과 함께 대학 행정직의 신설을 계획하였다. 그리고 발전장기계획의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대학교법과 정부 지원, 그리고 발전 기금 모금 등을 언급하였다. 여기에 그동안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어 왔던 교수 재임용제를 축소하고 교수 정년을 보장하는 제도 도입을 계획하였다. 전반적으로 대학의 행정과 재정 효율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대학 행정의 관료화 문제를 해결할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는 못하였다.

캠퍼스 합리화에 대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관악 캠퍼스는 2000년대에 대학원 중심 대학이 요구하는 추가적인 교육 연구 시설, 생활 교육 시설 및 지원 시설 등을 조성할 교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근의 부지를 교지로 추가 확보한다.
2. 관악 캠퍼스는 합리적인 교지 이용을 위하여 중심 구역에는 교직원과 학생에게 공통적으로 이용되는 핵심적인 지원 시설과 생활 교육 시설이 집적되게 하고, 교육 연구 구역에는 교육 연구 활동에 직접 관련되고 학문 지향성이 강한 교육 연구 시설이 수용되게 하며, 생활 문화 구역에는 다양한 문화 활동 및 레크리에이션 기능과 건전한 위락 기능을 포함하는 '대학 문화 단지'와 학생 기숙사, 학생 아파트, 교수 아파트, 보건 진료소 등을 포함하는 '대학 생활 단지'가 조성되게 하며, 대학 생활 단지와 남부 순환 도로 사이의 주거 지역을 대학촌으로 발전시킨다.
3. 연건 캠퍼스는 인근의 토지를 추가 확보하며,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위하여 전 경역을 의학 구역, 치학 구역, 보건학 구역, 병원 구역 및 지원 구역으로 구분하고, 교육 연구 시설, 생활 교육 시설 및 지원 시설을 전용, 증개축, 신축하여 유기적이고 특성화된 구조를 가지게 한다.
4. 농과대학과 수의과대학의 연구 및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이들 대학이 기초 학문 분야 및 인접 학문 분야와 밀접한 교류를 가지면서 연구 및 교육 기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원 캠퍼스를 이전하며, 사범대학 부속 학교 또한 사범대학의 교육 방법 연구 개발 기능을 위한 실험 학교로서의 지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위치로 통합, 이전한다.
5. 캠퍼스의 합리적인 건설과 관리를 위하여 캠퍼스계획분과위원회를 기획위원회 산하에 구성하여 캠퍼스에 대한 장단기 계획의 수립과 조정에 관한 심의를 담당하게 하고, 캠퍼스 계획의 변경과 수정은 당해 시설의 계획소위원회, 캠퍼스계획분과위원회, 기획위원회, 학장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가능하도록 한다.

캠퍼스 부문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연구를 위하여 여러 가지 시설을 크게 연구와 생활 부분으로 나누어 재배치하거나, 부족한 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1980년대 이후 서울대학교 학생, 교수, 교직원의 수가 2배 이상 증가하였고, 학문 발전에 따른 새로운 교육·연구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 서울대학교는 발전장기계획을 5개년씩 3개 단계로 나누어, 1단계는 체제 정비와 투자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 2단계는 대학 운영의 효율화를 통한 발전의 가속화, 3단계는 대학 기능의 국제화의 순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계획하였다. 각 단계별 활동 목표는 아래와 같다.

1단계(1987~1991년): 기반 조성 단계로서 체제 정비와 투자 강화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져, 연구와 교육 활동을 강화하는 각종 제도가 도입 혹은 완비되고 학생 과외 생활에 깊은 관심을 갖는 풍토가 조성된다.

2단계(1992~1996년): 발전 가속 단계로서 투자 강화 및 대학 운영의 효율화를 기해, 이 기간 내에 학사 및 행정에 관한 학부 및 대학의 자율권이 신장되고 교육 연구 역량을 대폭 확충하며, 학생들의 의료 후생 등의 복지 제도가 크게 향상된다.

3단계(1997~2001년): 도약 실현 단계로서 세계적인 대학들과의 경쟁에 들어가기 위해 대학 기능의 국제화를 도모, 연구 교육 활동 및 학생 과외 생활 등에 있어서 세계적인 일류 대학과의 경쟁 과정에 본격적으로 진입해 각종 제도와 시설 및 대학인의 자세가 이를 뒷받침해 주게 된다.

### 3) 발전 계획의 수정 작업과 서울대학교 2000년대 미래상(1995년)

장기적인 발전 계획에는 환경 변화에 대한 장기적 예측의 어려움 때문에 발전하는 사회에 부응하지 못한 점들이 불가피하게 등장한다. 이에 대학의 발전 방향을 그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조율하기 위해 몇 차례 수정이 이루어졌고, 대표적인 것으로 '서울대학교 2000년대 미래상' (1995년)과 '서울대학교 장기발전구상' (1998년)이 제시되었다. 이들은 공식적인 발전 계획은 아니었지만, 환경 변화에 따른 발전 계획 구상의 변화를 보여 준다.

서울대학교는 1989년 1월과 5월에 워크숍을 개최하고 학사 운영과 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였다. 이후 서울대학교 발전장기계획을 수정하기 위하여 1989년 8월 28일에

‘서울대학교발전장기계획수정연구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를 구성하였다. 12월 6일에는 발전장기계획에 대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발전장기계획이 서울대학교의 공식적인 계획이라는 점과 그 계획의 상당 부분이 실현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하였지만, 계획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되 학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서 지속적인 수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1990년 5월 3일에는 소위원회와 총장, 처·실·국장 간의 연석 회의가 열려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총괄하여 소위원회는 1990년 5월 21일에 「발전장기계획에 대한 평가와 전망」(이하 「평가와 전망」)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위원회에 제출하였다. 「평가와 전망」은 사업 계획 중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사업, 서울대학교 자체의 결정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 학과 간 및 대학 간에 이해관계가 상반되지 않는 사업 등의 경우에는 대부분을 이미 완성하였거나 상당한 정도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반해, 대규모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업, 조직 및 제도 개편 사항으로서 상위 법의 수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 등 서울대학교 자체의 노력만으로 수행할 수 없는 사업과 학과 간 및 대학 간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과제의 대부분은 추진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평가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조직 개편 및 제도 개선 등과 같은 체제 정비와 투자 강화에 역점을 두었던 1단계(1987~1991년)의 주요 사업으로는 학사과정의 학생 정원 감축, 대학원생 및 교수 정원 확대, 학부 설치, 연구 지원 행정 강화, 연구년제·전임 등록제·연구 등록제 도입, 도서관 업무의 전산화, 농수대의 이전 및 공간 구조 개선 등이 있으나 이중 상당수는 관련 학과의 반대, 학내외 여건 미비, 예산의 미확보로 추진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구처의 설립으로 인한 연구 지원 확대와 연구소 개편, 연구소 평가 제도 도입, 캠퍼스 전산망 건설, 석·박사과정 연계제, 교수평의원회 구성 등은 성공적으로 시행되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어 「평가와 전망」은 발전장기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대내외적인 원인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먼저 대내적 원인으로는, ① 계획 추진 절차상의 오류, ② 계획안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의 결여, ③ 계획안에 대한 학내 의견의 불일치, ④ 계획 자체의 미비, ⑤ 교내 상황의 변동, ⑥ 시설 행정의 일관성 결여, ⑦ 계획을 추진하는 전담 체제의 미비 등을 지적하였다. 또한 대외적인 원인으로는, ①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 부족, ② 계획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불비, ③ 상위 법(교육법 등) 개정 작업의 미진, ④ 사회·경제·정치적 상황의 변동 등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핵심 과제이면서 교수들 간에 이견이 있거나 쟁점이 된 과제들에 대해서는 보

다 심층적인 연구와 중점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내에서 광범위한 합의가 있어야 발전장기계획 수정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하였다. 논의가 필요한 핵심 과제로 제시된 것은 다음과 같다.

- 학사과정 학생 수의 감축 및 대학원과정 학생 수와 학사과정 학생 수의 비율 조정.
- 학사과정에 학부 설치를 유도하기 위한 보상 체계.
- 학과 및 대학 신설의 기준.
- 국제화 시대에 대비한 국제협력실 신설.
- 교수 충원 방안 및 승진 제도.
- 연구 기능 활성화와 본부 직할 연구소의 특수 법인체 전환.
- 생활 교육 전문 기관으로 대학문화원을 설치하고 그 산하에 문화·체육·상담·기숙사 전담 기구 설치.
- 대학촌 건설.
- 캠퍼스 계획 조정 방향 정립 및 기본 계획의 수정 계획 수립.
- 학내 최고 의사 결정 기구와 집행 기구 및 자문 기구의 구분 명료화.

이후 1993년부터 교내에서 학생 정원과 교수 정원 문제 등을 제기하기 시작하였고, 1994년에 이루어진 대학교육협의회와의 대학 평가 작업, 1995년의 총장 선거로 이어지면서 본격적인 수정 논의가 대두하였다. 이때의 수정 작업은 서울대학교의 자체 평가 작업과 더불어, 외부의 평가 작업이 함께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보다 객관성을 띠 수 있었다.

교육개혁심의회와의 건의에 따라 1994년부터 대학 평가 인정제가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그 준비 작업으로 서울대학교는 대학 자체 평가를 실시하였다. 자체 평가의 목적은 평가를 통해 스스로 문제를 진단·규명하고 그 해결 및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평가 인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며 기관 운영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대학 발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자체 평가 작업은 평가기획위원회, 평가연구위원회, 평가실무위원회에서 각각 기획, 연구 분석, 자료 작성 기능을 담당하였다. 각 위원회는 1994년 10월에 대학교육협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대학교육협의회와의 종합 평가 결과는, 교육 과정 개편과 함께, 수업의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점, 연구 지원 체제를 강화하고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진전을 이룬 점, 교육 지원 시설을 획기적으로 확충한 점, 재정 기반 확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한 점 등을 강점으로 꼽았다. 그러나 미래 지향적인 대학 목표의 설정을

위한 노력, 적절한 학생 규모의 검토,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의 시급한 전환, 획기적인 대학 재정의 강화, 국가와의 관계 재조정과 행정 체제 개혁 등을 과제로 지적했다. 이와 같은 대학교육협회의 평가는 그동안의 발전장기계획의 성과와 문제점을 잘 보여 준다.

서울대학교는 1995년 1월에 ‘서울대학교 2000년대 미래상’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1993년 12월에 기획 과제 연구 계획을 수립하면서 시작하였다. 1994년 3월 29일에는 ‘고등 교육 개혁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고등 교육 개혁의 방향과 실천 과제를 모색함으로써 ‘서울대학교 2000년대 미래상’ 작업을 위한 방향을 설정하였다. ‘서울대학교 2000년대 미래상’은 1994년 4월부터 10월까지 시행된 대학 자체 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1994년 이전까지의 논의를 총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20년 서울대학교의 미래상을 달성하기 위해 제시한 2000년대 10대 발전 전략은 다음과 같다.

1. 자율성의 확보.
2. 우수 두뇌의 국내 양성 선도.
3. 교육·연구의 탁월성 제고.
4. 중견 지도자급 인재 양성.
5. 학생 복지 향상과 참여 활성화.
6. 국제 교류의 활성화.
7. 사회봉사 기능의 확대.
8. 통일 대비 교육과 연구 강화.
9. 효율적 대학 운영 체제 확립.
10. 미래 지향적 캠퍼스 조성.

주요 세부 내용은 서울대학교법 추진을 통한 자율성 확보, 단과대학 및 학부 중심 운영체제 확립, 대학원생 증원과 재정 지원 강화, 교수의 획기적인 증원과 교수 평가제·연구년제 확립, 법과대학, 사범대학, 의과대학, 치과대학을 대학원과정으로 전환, ‘학부 대학’ 설치, 평의원회 활성화 및 학생 참여, 제2 캠퍼스 신설 등이었다.

‘서울대학교 2000년대 미래상’은 서울대학교법 추진을 통한 자율성의 확보, 단과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대학 운영 체제의 확립, 평의원회에 학생 대표 참여 등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대학의 자율화와 민주화라는 문제를 이슈화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또한 이를 기점으로 서울대학교법 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하였다.

#### 4) 서울대학교 장기발전구상(1998년)

1995년에 정부에서 대학 개혁 방침을 발표하면서 발전 계획은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교육부는 각종 규제의 완화·철폐에 따른 대학 자율성의 신장, 연구 능력 극대화를 위한 대학 교육 기관의 분화, 전문 직업인 양성 시 현장 적응 능력의 향상을 골자로 한 대학 교육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 방향은 종전의 “대학 행정 규제 및 지시, 정원 조정의 정책적 수단”에서 “행정 서비스 제공 지원, 평가제 도입에 따른 재정 차등 지급” 형태로 전환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발전 계획은 ‘학부제’와 ‘대학원 중심 대학’이라는 교육부의 대학 개혁안에 보다 중심을 두게 되었고, 학부제와 관계 법령 정비로 중심축이 옮겨졌다. 이에 서울대학교특별법 제정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고, 서울대학교의 ‘특수 법인화’도 논의되었다.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의 이행과 학부제 추진은 1987년의 서울대학교 발전장기계획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후 1994년에 있었던 ‘고등 교육 개혁 심포지엄’에서 구체적으로 거론되었다. 서울대학교의 연구 중심 대학으로의 전환과 이를 위한 학부 대학 운영을 골자로 하던 당시의 개혁안은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대학교의 특수 법인화를 제시하였다. 특수 법인화는 대학의 자생적 성장을 위해 재정·인사권의 독립이 필요하다는 맥락에서 제기되었는데, 이에 대해 정부의 지원 감축으로 인한 재정 여건의 악화, 교수 교직원 신분 변화에 따른 반발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1994년 이전의 논의를 총화한 ‘서울대학교 2000년대 미래상’에서는 서울대학교법 제정 추진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대학교법은 특수 법인화와는 달리 “국립대라는 위상을 유지하면서 국가 지원 확대와 재정 자율성을 추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후 1995년부터 본격적으로 서울대학교법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여, 서울대학교발전위원회 산하에 서울대학교법제정연구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였다. 이 위원회는 1996년 2월에 「서울대학교법 제정에 관한 연구」라는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1996년부터 1997년까지 서울대학교법 제정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서울대학교법의 핵심은 서울대학교 법적 위상의 재정립을 통한 재정과 인사 문제의 자율화이다. 이는 정부의 시장주의적 교육 개혁안 발표 이후 본격화한 ‘대학의 자율성’에 관한 논의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으나, 결국 학내외의 반발로 법제화에 실패하였다. 이상의 ‘서울대학교법’ 제정 추진에 대해서는 1장 4절에서 자세히 서술하였다.

한편 1995년 7월 5일에는 대학 발전 문제 전반에 걸친 총장 자문 기구인 서울대학교



발전위원회가 1차 보고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였는데, 교육 여건 개선 방안과 국제 교류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지금까지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대책을 제시하였다. 1차 보고서는 연구 여건 개선이라는 시각에서 볼 때 전반적으로 기존의 대학 발전 계획의 연장 선상에 있었다. 하지만 기존의 발전 계획들이 장기적인 계획으로 구체적이지 못했던 것과 달리, 이 보고서는 구체적인 중·단기 계획을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1996년 5월 1일에는 대학 발전에 관한 방안들을 개발·연구·심의하여 총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발전자문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발전자문위원회는 1년여의 활동을 통해 1998년 2월에 '서울대학교 장기발전구상'(이하 장기발전구상)을 발표하였다. 1990년대 중반 이후의 논의를 종합·정리하여 총장에게 제기한 것이었지만, 이것도 발전자문위원회가 대학 발전을 위해 건의한 자문 의견이었고, 공식 절차에 의해 확정된 실행 계획은 아니었다.

장기발전구상은 “연구 중심·대학원 중심 대학 이념을 전제”로 하여, 단기적으로 추진할 당면 과제로 학부 대학 제도 도입, 대학원을 독립된 조직으로 개편, 비전임 교수 및 연구원에 대한 지원·관리 체제 확립, 교수 업적 평가제 확립, 타 대학과의 학생·교수·학점 교류 활성화, 24시간 생활이 가능한 캠퍼스 환경 조성, 서울대학교 중심 보도 설치 등 7가지를 제시했다.

또 핵심 영역으로 학사 제도 개편, 연구 진흥, 국제화, 정보화, 대학 복지 환경 개선, 캠퍼스 재구축, 행정 조직 개편 등 7가지로 나누고 영역별 중점 과제를 제시하는 한편, 각 영역마다 발전 지표와 재원 확보 방안을 별도로 다루었다.

각 영역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우선 ‘학사 제도 개편’은 기존의 계획을 구체화하는 수준에서 대학원의 위상 격상, 학부 대학 설치, 교수 업적 평가제 등을 중점 과제로 제시하였다. 또한 세계 최상위권 연구 대학으로 진입하기 위해 ‘국제화’ 영역을 설정하여, 외국인 유학생 비율을 15%로 높이고 교수 및 박사후 연구원을 늘리는 한편, 학생 교류를 활성화하도록 하였다. ‘대학 복지 환경 개선’ 영역은 식당·주거 환경의 개선과 대중교통 환경의 개선, 보행자 중심의 공간 조성 등을 중점 과제로 설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캠퍼스 재구축’ 영역은 24시간 머무를 수 있는 캠퍼스 조성을 목표로 내걸고, 생태 통로와 서울대학교 중심 보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행정 조직 개편’ 영역은 각종 결정권이 집중되어 비대해지고 경직된 본부 조직과 공급자 중심 구조의 문제점에 초점을 맞춰, 행정 조직의 분권화·경량화를 지향하고, 기능별 조직에서 대상별 조직으로 전환할 것 등을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 장기적으로는 행정 기능에 따라 확일

적으로 구분된 조직을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조직으로 전환·통합하여 본부 규모를 축소할 것을 건의하였다.

우선순위나 중점 과제 없이 모든 분야에 균등하게 투자하도록 하는 기존의 종합 계획과 달리 1998년의 장기발전구상은 중점 과제를 선별하고 있는데, 계획 범위를 핵심 영역으로 한정하여 중점 과제를 제시하고 정책 목표와 이를 구체화한 발전 지표를 설정하고 수치화하여 계획안을 구성하고 있다. 실질적인 재원 확보 방안으로 예산의 탄력적 운영과 배분 및 발전 기금·연구 전용 기금 확보를 통한 자체 조달 예산의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제 4 절 세계 수준의 종합 연구 대학 지향: 서울대학교 장기발전계획(2002년)

‘서울대학교 장기발전계획’ (2002~2011년)(이하 장기발전계획)이 2003년에 발표되었다. 장기발전계획은 2000년 12월에 교육부에서 확정된 ‘국립대학발전계획’, 그리고 2001년 12월에 발표된 블루리본패널의 보고서와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구상되었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먼저 앞의 두 계획을 검토하고,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장기발전계획의 추진 과정과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겠다.

##### 1) 교육부의 국립대학발전계획(2000년)

교육부가 국립대학발전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은 2000년 2월 10일에 ‘국립대학발전계획추진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각 국립대학교에 이에 대한 논의를 제안하여 의견을 수렴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공공 부문 개혁의 일환으로 진행된 ‘국립대학구조조정’을 ‘국립대학발전계획’으로 변경하여 추진한 것이다. 이전에도 특별회계법 추진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으나, 종합적인 국립대학교 발전안이 공개적으로 논의된 것은 이때부터였다.

2000년 2월 15일에 국립대학발전계획수립을 위한 종합추진위원회 및 실무추진반이 구성되었고, 대학별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각 대학의 발전 계획을 수집하여 정리하였다.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립대학교는 국립대 체제 개편 논의에 대해, 자체적인 구조 조정과 국립대 간 협력 체제 강화 등 대학 내부의 노력 의사를 표명함과 동시에 정부로부터 재정 및 인사의 자율권 확대 및 이를 위한 법령 개정, 재정 지원 강화를 일관되게 요구하였다. 또한 내부 운영 시스템의 개선에 대해서 교수 업적 평가제 강화 및 연구 보조 인력 확충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하였고, 총장 자율 경영을 위해 조직과 인사에 대폭적인 자율성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재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 예산의 안정적 확보, 수익 사업의 활성화 등이 보장된 조건 하에서 특별 회계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요구를 바탕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부처 간 협의를 거친 끝에 정부는 2000년 12월에 국립대학발전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국립대학발전계획은 국립대학교 체제의 효율성 증진을 통한 21세기 지식 기반 사회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였고, 국립대학교의 역할을 재설정하는 것을 통해 국립대학교와 사립대학교의 역할 분담을 계획의 수립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국립대학교의 역할로 제시된 것 중 중요한 것은 국가 정책상 필요한 분야의 인적 자원 개발, 학문의 균형 발전을 위한 기초 학문 분야와 보호 학문 분야 육성 등이었다.

그리고 국립대학교 역할 분담 및 연계 체제 구축, 자율과 책무에 기반을 둔 대학 운영 시스템의 개선, 국립대학교의 질 관리 체제 확립이라는 세 항목을 정책 과제로 설정하여, 각각의 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국립대학 역할 분담 및 연계 체제 구축’ 부분에서는 각 대학을 중점 육성 분야 별로 인력 양성 방향에 따라 연구 중심과 교육 중심으로 특화하였다. 그리고 서울대학교가 포함되는 연구 중심 대학에서는 창의적 연구 및 학문 발전을 위한 인적 자원 양성, 학부제 확대 및 학사과정 규모의 축소에 상응한 대학원 확대, 석·박사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 운영 체제 구축, 고급 연구 인력의 양성, 연구 업적을 중심으로 한 학문 분야 및 대학에 대한 평가 등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자율과 책무에 기반을 둔 대학 운영 시스템 개선’ 분야는 ① 대학의 의사 결정 구조(Governance System)의 개편, ② 행정 체제 개편, ③ 재정 자율성 및 투명성 강화라는 세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그중 ① 대학의 의사 결정 구조의 개편 부분은 확정된 안이 마련되지는 못하였으나, 총장 선출 방법의 개선과 경영 계약제 실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책임 운영 기관화 추진, 학내의 민주적 의사 결정 기구를 도입함으로써 일부 교수 중심의 폐쇄적 대학 운영 체제에서 벗어나 학내 구성원 및 지역 사회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가칭 ‘대학평의원회’ 설치, 그리고 단과대학 학장 선임 방식 개

선 등이 시안으로 제기되었다. 또한 ② 행정 체제 개편 부분에서는 총보직 한도제 실시 등 조직의 자율성 신장을 위한 법령 개정, 단과대학 및 부속 시설의 통합 행정 실시, 행정직원 평정제도 개선 및 연수 강화 등을 단기 과제로 하였다. 그리고 ③ 재정 자율성 및 투명성 강화 부분은 기존 국립대학교의 회계 제도가 다원적으로 운영되어 종합적인 기획과 예산의 연계가 부족하다는 인식 하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일반 회계의 틀에서 벗어나 재정 운용의 신축성을 기함으로써 국립대학교의 경쟁력과 자율성을 제고하고, 국고 지원과는 별도로 대학에서 기성회비 등을 통해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등으로 지출하는 것을 일원화하여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국립대학교 특별 회계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립대학의 질 관리 체제 확립’ 부분에서는 교육 및 연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교수 계약 임용제와 교수 연봉제를 도입하고, 교수 업적 평가제를 개선하며 우수 교수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 평가 결과를 예산 배분과 연계시키는 등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발적으로 효율성 및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유도하는 대학 평가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교육부의 국립대학발전계획이 발표되자 이에 대한 반대 여론이 확산되었다. 2001년 5월 22일에는 전국국공립대학교수협의회,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준비위원회 등이 참여한 ‘국립대학발전계획 철회와 공교육사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발족하여 본격적인 반대 운동을 벌여 나갔다.

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에서는 2001년 9월 12일에 국립대학발전계획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어 10월 8일에 이사회에서 교수협의회회의 입장을 의결하였다. 의결 내용은 ① 모집 단위 광역화와 학사 제도 개선, ② 교수 처우 문제와 계약제 임용 및 연봉제, ③ 대학과 지배 구조 개혁(민주화, 자율성 및 총장 선출)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모집 단위 광역화와 학사 제도 개선’에서는 현재 방안에는 반대하나 개별 학문의 유지가 보장되면 학문 간 유동성을 살리는 통합안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학사 제도의 가장 핵심적 사항인 모집 단위에 대하여 대학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강요되고 있는 획일적 광역화를 중단하고, 학문적 연관성이 뚜렷한 소수 유사 학과들의 자율적 통합을 유도하되 통합이 부적절한 전문 분야의 학과는 독립적인 모집 단위로서 존속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교수 처우 문제와 계약제 임용 및 연봉제’에 대해서도 대체로 반대 입장이었다. 일부 교수들은 제도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나, 시행안대로 2002년에 계약제를

도입하고 2003년에 연봉제를 실시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교수협의회는 교수의 안정적 교육 및 연구가 대학 발전과 경쟁력 제고의 원천이므로, 교육인적자원부는 계약제와 연봉제의 강행을 중단하고, 이의 강제 시행을 규정한 관계 법령을 개정하라고 요구하였다. 또한 부교수와 정교수에 대하여는 신규 및 현직을 불문하고 정년 보장을 완전히 실시하고, 조교수에 대하여는 기간제 임용을 적용하며, 교수의 최저한의 생활 보장을 위하여 기본급을 상위 사립대학 수준으로 개선하여야 하며, 직급에 따라 지불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세 번째, ‘대학과 지배 구조 개혁(민주화, 자율성 및 총장 선출)’에 대해서도, 국립대학발전계획이 관료 중심의 행정 규제로 인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었다. 총장 선출 방식은 기존대로 직선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선거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였다. 구체적으로 투표 방식을 1인 2표제에서 1인 1표제로 하고, 선거 운동을 제한하며 임기 연장 문제도 적극 검토하는 대신, 총장소환제도를 마련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대학의 민주화와 자율성 및 총장 선출 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 교수협의회를 대학의 의결 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였다.

## 2) 블루리본패널(교육개선패널)의 활동

블루리본패널은 미국, 유럽의 대학들이 학교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꾸리는 한시적인 회의체를 일컫는 말로, 서울대학교의 블루리본패널은 2000년 초에 구성되었다.

서울대학교에서 블루리본패널이 출범하게 된 배경에는 그동안의 발전 계획에 많은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 즉 비슷한 개혁을 추진했던 세계 각국의 선도 대학들의 사례를 통해 충분한 시사점을 도출하지 못한 점, 서울대학교를 변화시킬 종합적인 프로그램으로 이어지지 못한 점, 그리고 학내의 이해관계자들의 우려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점 등의 한계가 지적되었다. 이에 서울대학교가 직면한 도전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서울대학교를 변화시키기 위한 방안 및 추진 과제 권고안을 제시하도록 하는 새로운 접근 방법으로 블루리본패널을 시도한 것이다.

블루리본패널의 구성원은 6명으로, 세계 각 대학에서 경영 경험이 풍부하고 국가의 고등 교육 정책에 관여했던 인물들이었다. 그리고 경영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

(McKinsey)가 공익 차원에서 무보수로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패널의 활동을 도왔다. 아래는 구성원 명단이다.

헨리 로조프스키(Henry Rosovsky): 패널 의장. 하버드대학 석좌 교수, 전 하버드 문리대학장.

마이클 코완(Michael Cowan): 캘리포니아 주립대학(UCSC) 미국학 교수 겸 교수회의 의장.

하스미 시게히코(蓮實重彦): 도쿄대학 명예교수, 전 총장.

도널드 P. 제이콥스(Donald P. Jacobs): 켈로그 경영대학원 명예학장, 전 학장.

로널드 옥스버러(Ronald Oxburgh): 케임브리지대학 지구과학과 교수, 전 런던대학 임페리얼 컬리지 총장.

휴고 소넨샤인(Hugo Sonnenschein): 시카고대학 석좌 교수 겸 명예 총장, 전 총장.

블루리본패널은 2000년 10월 8일에 1차 회의를 개최한 이후, 서울대학교의 현황을 이해하기 위해 맥킨지에 자료 협조를 부탁하는 등 기존에 수행된 분석을 검토하였으며, 서울대학교의 주요 당국자, 교수, 학생 및 기타 대학 관계자들과 면담을 하였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 청와대, 재계 및 시민 단체 지도자들과도 면담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서울대학교 재학생 688명에 대한 무기명 설문 조사도 시행하였다. 이와 같은 활동의 결과, 2001년 12월 17일에 『세계적 연구 중심 대학의 창조: 서울대학교 사례 연구(Elevat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to a World-Class Research University)』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먼저 서울대학교의 현황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첫째, 2001년 현재 서울대학교의 경영 및 행정 시스템은 업무의 책임과 권한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의사 결정 결과가 큰 성과를 거두기 힘들고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둘째, 정부의 자금 지원은 장기적인 계획을 실행할 수 있을 만큼 안정적이지 못하고 기금 조성도 낮은 수준이며, 무엇보다도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재분배할 수 있는 유연성을 결여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셋째, 최고 수준의 학문적 성과를 내도록 장려하는 프로세스가 없다는 것이다. 즉, 외부 전문가에 의한 정기적인 연구 업적 평가나,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교수진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나, 성과에 대한 의미 있는 인센티브 제공 등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었다.

이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3가지의 포괄적인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11개의 추

진 과제를 권고 사항으로 제시하였다.

· 목표 1. 적절한 학교 경영 구조의 수립

- 추진 과제 1.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총장을 임명하고, 서울대학교를 대표하여 정부와 협상하며, 대학 당국에게 성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역할을 담당할 이사회를 구성한다.
- 추진 과제 2. 핵심 직책(총장 및 학장)의 임기를 연장하고, 임명 절차를 개정하며, 주요 직책의 역할을 재정립함으로써 대학 행정 본부의 역할을 재편하고 강화한다.
- 추진 과제 3. 대학 경영의 공동 수행을 통해 교수들이 대학 행정 본부에 의미 있는 조언을 하고, 대학에 대한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마련한다.

· 목표 2. 적절한 평가 및 세계적인 표준을 토대로 최고의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매진

- 추진 과제 4. 정기적으로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각 학과의 학문적 성과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 메커니즘을 수립한다.
- 추진 과제 5. 전임 강사와 조교수는 물론 정교수까지도 대상으로 하는 철저한 교수 평가제를 도입한다.
- 추진 과제 6. 우수한 성과를 낸 학과 및 교수를 인정해 주는 효과적인 보상 제도를 수립한다.
- 추진 과제 7. 서울대에 행정 직원을 채용하고 계발할 수 있는 권한 및 책임을 부여한다.
- 추진 과제 8. 학부 교육의 현실 적용 가능성과 내실화를 도모한다.
- 추진 과제 9. 서울대의 세계화를 적극적으로 장려한다.

· 목표 3. 우수한 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한 기금 조성 및 분배

- 추진 과제 10. 교육인적자원부와 서울대는 우선순위가 높은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해서 부차적인 자금원의 창출 등을 포함한 자금조달 메커니즘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다.
- 추진 과제 11. 다른 재원으로부터의 기금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항구적인 발전 기금을 조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모금 활동을 강화한다.

그런데 패널의 한 사람이었던 하스미 시게히코 전 도쿄대학 총장은 “패널들이 가진 영·미식 사고는 한국의 풍토와는 많은 차이가 날 것”(『대학신문』 2001년 10월 15일자)이라고 우려하였다. 실제로 블루리본패널의 보고서에 대해 학내에서 적지 않은 반발이 있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2002년 1월 24일에 교수협의회에서 발표한 “Blue Ribbon

Panel” 보고서에 대한 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회의 견해 및 성명서」였다. 교수협의회는 이 성명서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지적하였다. 첫째, 블루리본패널이 제안한 14명의 학내 외 인사(정부 인사 3명 포함)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총장을 선임하는 제도는 우리의 상황에서 정부의 대학 지배 방편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반대하며, 대학 민주제와 총장 직선제를 고수한다. 둘째, 보고서에 인용된 자료의 신뢰성과 타당성에 많은 문제가 있으며, 이에 근거한 오도된 평가는 수정되어야 한다. 셋째, 서울대학교와 규모가 유사한 미국 우수 대학을 비교할 때 서울대학교의 예산 수준은 1/10 내지 1/15에 불과하며, 이를 무시한 단순 비교는 서울대학교의 우수성을 부당하게 폄훼하려는 저의라는 것이다. 결국 서울대학교가 세계적인 연구 중심 대학으로 성장하여 세계 유수의 대학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을 우리 사회가 원한다면, 서울대학교 구성원들의 노력과 함께 사회적 합의에 기반을 둔 국가적 지원 체제가 확고하게 갖추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블루리본패널의 보고서는 전체적으로 교육부의 ‘국립대학발전계획’과 비슷한 기조였으며, 이 두 가지 계획안은 이후 서울대학교 장기발전계획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 3) 서울대학교 장기발전계획(2002~2011년)

2001년 5월 4일에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실장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장기발전계획연구위원회가 조직되었다. 장기발전계획연구위원회는 각 대학(원) 및 부속 기관이 제출한 자체 발전 계획을 검토하고 연구위원회의 및 각 분과별 연구위원회 의를 통하여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 2001년 9월 21일에는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학내 각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장기발전계획연구위원회의 협의 위원을 선정하여 장기발전계획에 대해 협의하였다. 10월 10일에는 외국 대학의 총학장급으로 구성된 블루리본패널과 장기발전계획위원회 연구 위원의 연석 회의를 개최하여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11월 7일에는 장기발전계획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원래 장기발전계획은 적용 연도가 시작되기 전인 2001년 말에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여론 수렴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이기준 총장의 조기 퇴임과 보직 교수진의 교체 등으로 인한 장기간의 행정 공백으로 발표가 연기되었다. 그러나 신임 총장과 집행부가 전임 집행부에서 구상한 장기발전계획에 대해 근본적으로 입장의 차이를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표가 지연된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다음과 같은 장기발전계획의 총장 서언(序言)은 저간의 사정을 잘 보여 준다.

현 집행부는 마무리 단계에서 이 사업을 이어받았고, 신·구 집행부 간의 장기발전계획 ‘패러다임’ 차이로 인한 갈등도 있었다. 그러나 본 계획이 사실상 이전 집행부에 의해 주도되었던 점을 존중하여, 새 집행부의 관점은 일단 보류하기로 결정하였다. 결국 「제3차 서울대학교 장기발전계획」은 최소한의 수정을 거쳐 전임 집행부의 당초안대로 공표되는 발전안이다. 신임 집행부는 앞으로 마련될 중·단기계획을 통하여, 자신들의 시각을 계속 보완하고 발전적으로 수립시켜 나갈 예정이다.

장기발전계획은 2003년 8월 14일과 20일에 각각 학장회와 평의원회의 심의를 마쳤으나 공식 발표는 하지 않았다. 이는 학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구속력을 갖는 장기 계획은 무의미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기 때문이었다. 정운찬 총장은 이에 대해 “연구 중심 대학과 같은 특정한 목표를 내세우는 것보다는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987년에 ‘서울대학교 발전장기계획’이 수립된 이후 총장이 바뀌고 시대가 변함에 따라 여러 차례 수정안 또는 새로운 형태의 발전 계획안이 나왔던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또 이런 점을 고려하여 장기발전계획은 그 적용 기간을 서울대학교 발전장기계획의 15개년보다 짧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의 10개년으로 설정하였다.

장기발전계획은 1979년의 ‘서울대학교 발전10개년계획’에서 대학의 이념으로 천명한 ‘학문의 대학, 민족의 대학, 세계의 대학’이 21세기에 도 서울대학교의 장기 발전 이념으로 계승되어야 한다고 재확인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로 “세계 수준의 종합 연구 대학”을 설정하였다. 이 목표는 좀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첫째, 서울대학교가 ‘세계 수준의 대학’으로서 지향해야 할 과제는 세계 여러 대학 중에서 핵심이 되는 것으로, 이는 서울대학교가 세계적 수준의 전문가 및 학자를 양성하는 대학으로 발전해야 함을 의미한다. 교육의 질적 측면을 제고하여 미래 사회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어야 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지식 선진국으로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둘째, 서울대학교가 ‘종합대학’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학의 3대 핵심 기능인 연구·교육·사회봉사 기능이 종합되면서 이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으로 거두

어야 한다. 또한 국가 발전을 위한 각종 학문의 전문화 및 다양화를 이루면서 이들 학문 간의 협력과 종합화를 통해 21세기를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요구되는 것은 학제 간의 종합화인데, 이를 위해서는 학사과정과 대학원과정을 유기적으로 운영하여 학사과정이 강화되면서 동시에 대학원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이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서울대학교는 '연구 대학'을 추구한다. 21세기의 대학에게는 기존 지식을 체계화하여 교육함으로써 후속 세대에게 이를 전수하는 역할과 더불어 연구 활동을 통해 보다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지식을 창출하는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세계 수준의 연구를 통해 교육과 사회봉사의 역할을 유기적으로 종합화해야 할 것이다.

장기발전계획은 크게 대학의 체제, 교수의 임용 및 활동 보장, 연구 활동 및 지원 체계, 학사의 구조 및 운영, 학사과정 학생 선발 및 자치 활동, 대학 자원의 활용, 국제화라는 7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이하에서는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다. 먼저 대학의 체제와 관련한 장기발전계획의 특징은 서울대학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한 것과 운영 체제를 정립한 것이다. 정부의 대학 정책이 오히려 대학의 기능을 왜곡하였고, 특히 국립대학교에 대한 통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인식 하에 대학의 체제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국립대학교인 서울대학교의 발전과 세계적 역량 제고는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다음과 같은 대학 체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 1. 대학의 법적 지위

서울대학교는 다음과 같은 기본 원리에 의해 미래 지향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 대학의 자치와 자율성: 대학 인사의 자율화, 학생 선발의 자율화, 대학 재정의 자율화
- 국립대학과 국가: 국가는 국가의 비용으로 대학을 설립하고, 그 대학(국립대학)이 대학의 본질과 원래의 기능에 합당하게 운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2. 운영 체제

- 총장의 대학 운영 자율권 고양.
- 서울대학교정책심의회(가칭) 설치.
- 명실상부한 교수의회(가칭) 설치와 운영.
- 총장과 학(원)장의 선임 방식 개선과 학장회 개편.
- 행정 권한과 사무의 분권화 및 분산.

### 3. 행정 조직

- 학사 업무를 하위 기관으로 이양 또는 위임하고, 단위 기관의 의사 결정권을 지금보다 대폭 강화하여야 할 것임.
- 대학의 업무를 학사 운영 및 내부 관리와 대외 사업 업무로 이분하여 두 명의 부총장을 두는 것을 검토하여야 함.
- 연구처를 강화하여 그 산하에 앞으로 설립될 기술이전전담법인 등을 두는 등 연구 대학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해야 함.

교수와 관련해서는, 2001년도 법령 개정으로 외국인 전임 교수의 채용이 가능해지고 계약제 교수 등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으므로 교수의 신분 체계도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또 대학의 경쟁력과 수월성을 제고하기 위해 우수한 교수 인력을 확보하고 기존 교수들이 연구와 교육에 탁월한 업적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기존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 1. 교수 신분의 체계

- 전임 교수의 개선 방안: 재임용 제도의 강화, 교내 겸임 교수의 확대, 교수의 신분 관리 강화, 조기 자원 퇴임 제도의 부활, 여성 교수 할당제.
- 초빙 교수 제도의 개선 방안: 원칙적으로 계약제로 운영하고 능력이나 업적에 따라 계약 기간·처우·신분 형태를 달리함, 국내외 타 기관과의 겸직을 허용, 석좌 교수 제도의 확대.

#### 2. 교수 임용 제도

- 신규 임용 제도에 관한 개선: 대학(원)별 상시 채용 제도의 실시, 특별 채용 제도의 활용, 종합 평가적 심사의 강화, 동일 대학 동일 학과 출신자의 임용 제한의 완화.
- 재임용, 승진 및 정년 보장 제도에 관한 개선: 재임용은 계약제로 전환, 이의 제기 담당 기구의 설치.
- 교수 정원 배정 방식의 개선: 교수 정원 산출 기준의 다양화, 최소 정원 확보율의 설정.

#### 3. 교수 평가 제도

- 교수 평가의 관리 체계 확립.
- 업적 평가에서 업무 평가로 전환.
- 계량화하기 어려운 업무에 대하여 일관성 있는 업무 평가를 도모할 수 있는 기구를 설립.
- 모든 교수에게 적용되는 기본적인 요구 사항 이외에는 평가 방식을 다양하게 함.
- 대학의 특성, 교수 개인 업무의 특성, 사용 목적에 따라 평가 자료를 다양하게 활용함.

#### 4. 교수의 복지

- 교수 처우 개선.
- 주거 복지를 위한 장단기적 대책의 수립.
- 여성 교수 및 인력을 위한 기반 시설의 확충.

연구 부문에서는 대학이 본연의 연구 기능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제공하는 역할을 선도적으로 수행할 것을 과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우수 연구원과 충분한 연구비를 확보하고, 현재 대학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연구 시설 개선을 대학본부에서 주관하여 추진할 것을 제시하였다.

#### 1. 연구 정책

- 연구 행정 업무의 분권화.
- 연구 안식년 제도의 개선.
- 연구 결과에 대한 권리를 대학이 적극 관리·보호.

#### 2. 연구 자원

- 교수 정원 증원과 권위 있는 연구자 유치.
- 교수의 연구 방향 전환 및 재충전을 적극 지원.
- 연구원과 대학원생의 연구 및 생활 조건의 개선.

#### 3. 연구 시설 및 정부 기반 구축

- 연구소 및 연구지원센터를 적극 지원.

#### 4. 연구 업적

- 연구의 수월성 추구.
- 연구 결과의 응용 및 적극적 홍보.

현재 서울대학교의 편제는 대학(원), 학과 또는 학부의 병렬적 설치 및 잦은 명칭 변경, 학문 체계에 대한 원대한 청사진의 결핍 등이 문제로 지적되지만, 나름의 역사성 때문에 개선을 시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장기발전계획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 사항에 대한 이해와 합의를 통해 대학 편제를 성공적으로 개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하나는 학사과정에서는 충실한 교양 교육과 기초 학문 교육을 적절히 결합한 토대 위에서 각 대학이 목표로 하는 전공 교육을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각 단위 기구가 목표로 하는 인재의 육성은 분과 학문의 특성을 살려 자율적으로 그리고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 하에 학사 구조와 운영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 1. 대학의 편제

- 치과대학의 전문 대학원으로의 전환.
- 법과대학 및 의과대학을 전문 대학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
- 경영대학은 당분간 학사과정과 대학원과정을 운영.

## 2. 학사과정 운영

- 교양 교육의 개선 방안: 상이한 층위에 따른 교양 과목 운영, 1학년 학사 지도 내실화.
- 전공 교육의 개선 방안: 전공 탐색 과목의 다양화, 전공 선택 시기 및 방식의 다양화, 학문의 균형적 발전 도모.

## 3. 대학원과정 운영

- 전공 정원 및 박사 배출 인원의 유동적 조절.
- 사회적 지원이 적은 학문 분야에 대한 대학 차원의 지원.
- 학문 후속 세대의 양성을 위한 지원 확대.

현행 신입생 선발 제도는 정부가 모집 단위, 정원, 전형 방법 등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어 대학교 또는 학문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살리기 어렵다. 따라서 장기발전계획에서는 학사과정 학생 선발 및 자치 활동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을 시급한 과제로 제시하고, 그에 의거하여 방안을 마련하였다.

## 1. 학생 선발

- 정부는 학생 선발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학생 선발 권한을 대학에 위임하여야 함.

## 2. 학생의 자치 활동

- 전시 및 공연 시설과 기자재 관련 예산 및 행정 지원의 확보.
- 캠퍼스 인접 구역에 본교가 운영하고 관리하는 가칭 '서울대학교 문화센터' 건립.

## 3. 학생의 복지

- 취업 및 진로상담소 개설.
- 장학금 확충 및 생활 형편 곤란자 위주의 장학금 지급 제도 실시.

발전 계획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으려면 충분한 재정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장기발전계획에서는 전체 예산의 절대적 부족과 국고 의존형 예산 구조를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포화 상태에 이른 캠퍼스의 현황과 과제를 검토하고 세계적 대학에 걸맞

는 캠퍼스 조성을 위한 개선안을 모색하였다.

### 1. 대학의 재정

- 장기적인 전략 하에 정부의 재정 지원을 추구.
- 정부 기관 및 민간 부문으로부터의 지원 확보를 통한 연구비 확충.
- 기존 수익 사업의 운영 개선과 새로운 수익 사업의 개발.
- 자산 관리를 외부 전문가에게 책임 경영제로 위탁.
- 사회적 수요가 많은 대학 또는 전문 대학원을 대상으로 등록금을 차별적으로 인상.

### 2. 재정 운용 시스템의 개선 방안

- 예산회계법의 적용에서 벗어나 회계 제도를 개선.
-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 장기적 재원 지원 계획을 정부로부터 확보.
- 충액 예산제 시행 및 총장의 자율적인 예산 편성권과 예산 전용권을 확보.
- 교육 활동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수익 사업의 운영을 위한 독립 법인 설립.
- 독립 법인은 발전기금 산하의 수익 사업을 포함하는 모든 수익 사업을 통합하여 경영하고 새로운 수익 사업을 개발하는 책임도 맡음.

### 3. 대학 시설

- 장기적인 학사 계획에 기반을 둔 캠퍼스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설의 건립부터 유지, 관리 체계를 과학화함.
- 정보화와 멀티미디어의 기능을 갖춘 강의실 확충.
- 쾌적한 캠퍼스를 위하여 보행 및 주차 제도 개선.
- 서울대학교 캠퍼스와 주변 지역을 문화적, 공간적으로 통합한 대학촌 조성.

### 4. 신 캠퍼스 조성

#### 5. 행정 인력 및 기술 인력 자원

- 포상제와 성과급(인센티브) 제도의 강화.
- 직능별 인사 배치와 업무량 평가제에 따른 인사 배치.

마지막으로 국제화이다. 최근 국제 교류 추진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였다. ‘세계 수준의 종합 연구 대학’이라는 장기발전계획의 구체적 목표도 국제 학술 교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다. 서울대학교는 국제적 위상 제고와 함께 인류 사회 번영에 능동적으로 공헌하는 교육과 연구를 위하여 국제 교류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국제화와 대외 교류를 위한 종합 계획 수립.
- 세계 우수 대학과의 학술 교류 협정 체결 확대.
- 영어로 하는 강좌의 수를 대폭 확대.
- 외국인 교수 채용 확대.
-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 추진.
- 교수의 6개월 이상 해외 파견을 획기적으로 확대.
- 학생 교환 프로그램을 대폭 증가.

이상과 같은 대학 발전 계획 구상은 학내외의 여러 상황 변화 속에서도 서울대학교의 발전 방향의 지침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발전 계획에 따라 많은 부분이 발전하였고, 이는 현재 진행 중이기도 하다. 근래 점점 사회 변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장기적인 발전 계획의 효용성에 대한 회의도 대두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발전 계획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다만 현실적이고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현재 ‘국립대학교 법인화’ 등 서울대학교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서울대학교가 어떻게 ‘세계 수준의 종합 연구 대학’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수립하여 실천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이다.



## 제3장 교수 사회의 변천

교수는 대학 운영의 핵심 주체이고, 대학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또 대학 자율성과 대학 자치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먼저 교수 인사 제도의 변천과 교수 임용 상황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총장 선출 제도의 변화, 교수 단체의 활동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 제 1 절 교수 인사 제도 변천과 임용 상황

#### 1) 초창기 교수진과 한국전쟁기의 수난

##### (1) 교수 충원과 그 구성

해방 전에는 고등 교육 기관의 교수진이 거의 일본인이었다. 때문에 해방 후 각 대학의 교수 충원은 대단히 시급한 문제였다. 식민지에서 해방된 시점에 교수 요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을 뿐 아니라 새로운 교육 이념에 입각해서 교육을 담당할 적합한 교수 요원이 필요하였다. 미군정은 교수진 충원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중등학교나



초등학교와 달리 대학교수를 단시일 내에 양성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미군정은 교육 관계 인사로 구성된 한국교육위원회가 건의한 인물들로 경성대학 각 학부 부장과 관립전문학교 교장을 임명하였다. 경성대학의 경우, 법문학부는 일제 식민 지기에 국학을 연구하던 한국인 학회였던 진단학회 구성원들이 교수진의 주축을 이루었고, 의학부는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출신으로 각 의학 전문학교에서 교편을 잡던 인사들이 중심이 되었으며, 이공학부는 연구의 성격상 정치·사회적 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으므로 과거 대학 교수들을 중심으로 교수진이 구성되었다.

1946년 8월에 경성대학과 관립 전문학교들을 통합하여 국립서울대학교를 설립함에 따라 전신 학교의 교직원들은 모두 사임하고 국립서울대학교 교직원으로 재임명되었다. 이로써 초창기 서울대학교의 교수진은 경성대학 각 학부 부장과 관립전문학교 교장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미군정과 교육 기구를 장악한 한국민주당의 정치적 이유에서 비롯되었다는 이유로 일부 교수들의 불만을 샀다. 게다가 서울대학교의 설립을 둘러싸고 발생한 소위 '국대안 파동' 외중에 국대안 반대 교수들은 국립서울대학교에 근무할 의사가 없음을 통고하고 대학을 떠나기도 하였다. 1947년 5월 12일에 미군정은 국대안을 반대하는 '적색 교수 및 학생'의 제명 처분을 내렸는데, 교수의 경우 총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380여 명이 대학을 떠나게 되었다. 국대안 반대 교수들의 사직은 결과적으로 교수 요원 부족을 더욱 악화시켰고 한국전쟁 이후까지 이러한 사정은 계속되었다.

게다가 국립서울대학교의 연립대학교적인 성격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당시는 대학본부가 종합적인 기능을 갖지 못한 시기였으므로 교수 정원도 대학본부의 규제나 계획보다는 각 단과대학의 재정 형편에 크게 좌우되었다. 즉 예산이 각 단과대학별로 책정되고 집행되었기 때문에 교수 채용도 단과대학별 예산 사정 및 집행과 직결되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대학별·분야별로 교수 수급 상황은 매우 불균등하였다.

교원의 직급을 보면, 일제 식민지기에 교수와 조교수뿐이던 전임 교원의 직급을 1946년 12월에 문교부 직급 규정에 의거하여 교수·준교수·조교수·전임강사로 세분화하였다. 준교수는 곧 부교수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강의를 담당할 수 있는 조교에 해당하는 교수 조무원이 있었다. 교원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았다.

- 교수: 박사학위 소유자, 이와 동등 이상의 학계 권위자 및 전문학교 졸업 후 5년 이상 연구한 자로서 10년 간의 경험년수를 요함.

- 준교수: 석사학위 소유자, 1년 간 대학원에서 연구한 자 및 전문학교 졸업 후 4년 간 연구한 자로서 10년 간의 경험년수를 요함.
- 조교수: 석사학위 소유자 및 전문학교 졸업 후 3년 간 연구한 자로서 8년 간의 경험년수를 요함.
- 전임강사: 학사학위 소유자 및 전문학교 졸업 후 3년 간 연구한 자로서 4년 간의 경험년수를 요함.

이 자격 기준은 일제 식민지기에는 고등 교육의 혜택이 일부 사람들에게만 돌아갔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다분히 이상적이었다. 또한 교수가 부족한 형편이어서 단과대학과 학문 분야에 따라 기준 적용에 차이가 있었다. 당시 문리과대학과 의과대학은 높은 수준의 교수를 확보할 수 있었지만 다른 분야는 자격과 상관없이 교수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형편이었다.

한편, 교수는 이사회에서 임면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사회가 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학 운영에 관한 문제는 사실상 학장회에서 논의되었고 인사 문제도 마찬가지였다. 이사회의 역할은 학장회의 결정을 승인하는 정도에 불과하였다.

교수를 채용하려 할 경우, 해당 학과의 교수들이 합의하여 학장에게 요청하고 학장은 대학 정원과 학과 간 교원 비율을 고려하여 총장에게 임명을 요청하였다. 문리과대학과 의과대학의 경우 학장은 때때로 인사 문제를 교수회에서 논의하게 하였다. 총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교직원을 임명하였지만 단과대학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교수의 신분 보장은 법제적으로 명문화되지는 않았지만 관행에 따라 신분이 보장되는 편이었다. 예컨대 교수 해임의 경우, 해당 교수가 불복하게 되면 이사회에 출두하여 불복 사유를 진술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다. 이처럼 당시 인사 행정은 법제적인 규제가 약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학의 자율적인 영역에 속하였다.

초창기 교수들의 면면을 문리과대학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경성제국대학 출신자와 일본 유학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1948년 6월 말까지 경성대학 법문학부와 국립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에서 교수, 부교수, 조교수, 시간 강사로서 근무한 152명의 출신 학교를 살펴보면, 경성제국대학 출신이 48명, 일본의 제국대학 출신이 37명, 기타 일본 대학 출신이 35명으로 모두 합하여 120명, 79%를 차지한 반면, 미국 유학자는 4명에 불과하였다. 이는 ‘국대안 파동’이나 교수회 권한을 둘러싼 갈등이 일어난 상황에서 일본

식 혹은 제국대학식 대학 운영 관행을 잔존하게 하여, 미군정기 새로운 유형의 교육 제도 도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강명숙, 2002 『미군정기 고등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137~140쪽).

## (2) 한국전쟁기 교직원의 수난

한국전쟁 발발로 교수 요원은 더욱 감소하였다. 많은 교수가 미처 피난을 가지 못하고 서울에 남은 결과, 상당수 교수가 납북되거나 자진하여 월북하였다.

서울에 남아 있다가 인민군 또는 보안서원에 끌려가 납북된 교수들은 고령의 최규동 총장을 비롯하여 이갑수(생리학) 치과대학장, 손진태(사학) 문리과대학장, 문리과대학 김구경(중문학), 김진섭(독문학), 이인영(사학) 교수, 상과대학 강정탁(농업정책) 교수, 예술대학 윤승욱(조소), 안성교(바이올린) 교수, 사범대학 정순택(수학), 이능식(사학) 교수 등으로 모두 당시 학계를 이끌던 중견 학자들이었다. 뿐만 아니라 공과대학 김영근(영어) 교수는 자택에서 좌익계 학생에게 납치되었고, 사범대학 최경달(체육) 교수도 학생자치위원회에 끌려가 감금된 이후 생사를 알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불행은 서울대학교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지만 중견 학자들의 피랍은 커다란 손실이였다.

일부 교수는 비록 피랍은 면하였으나 서울에서 90일 동안 지하에 은신한 채 전전공공하였고, 일부 교수는 본의 아니게 대학에 나가 그들에 협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람들은 초기에는 각 단과대학별로 조직된 소위 '자치위원회'에 참여하였고, 후기에는 인민군 점령 하의 서울대학교 교수로 정식 임명된 사람들도 있었다. 대부분 신분 위협이나 생활 곤란 때문에 피동적으로 참여하였지만, 적극적으로 협력한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주로 좌익계 교수·학생들이었는데 서울이 수복될 때 대부분 자진 월북하여 남아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상황이 이러했지만, 서울에 남았던 교수들은 대부분 서울 수복 후 대학 당국의 심사 대상이 되었다. 서울대학교에는 교수들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최규동 총장이 납북되었기 때문에 당시 문교부 고등교육국장이던 김두현(전 문리과대학 철학과 교수)이 서울대학교 임시 관리 책임자로 임명되었고, 그를 중심으로 각 단과대학에서 심사 위원을 한 사람씩 차출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심사 위원은 대개 남하하였던 교수, 이른바 도강파(渡江派)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위원회는 1950년 10월에 심사에 착수하였다. 남하하지 못한 교수 전원이 심사 대상이 되었고, 자술서, 투서 등을 참고하여 심사하였다. 심사는 각 단과대학에서 먼저 이루어졌고, 위원회는 각 단과대학에

서 보고한 심사 결과를 보고 재심을 하였다. 그러나 대학본부의 전체 위원회는 거의 재심 없이 11월에 각 단과대학의 심사 결과를 문교부에 통고하였다. 이때 서울대학교는 파면 114명, 권고사직 15명, 정직 34명 등 총 163명의 교수에 대한 징계를 통고하였다.

문교부는 이를 재심하여 활동이 현저했던 소수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고, 정직 혹은 감봉 처분을 내리기도 하였다. 문교부의 최종 처분은 서울대학교의 자체 심사 결과보다는 훨씬 경미하였고, 이 징계 조치도 이후 수차례에 걸친 사면을 통해 백지화되었다. 이는 일반인들에 대한 부역 심사에 비해 훨씬 관대한 것이었으나, 이후 학문 활동에 장애가 되었다. 건국 후 반공 이데올로기를 통한 강력한 사상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전란 속 사상 정화 조치가 이를 더욱 강화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전시라는 특수한 사정으로 많은 교수가 군에 근무하게 되어 교단에 설 수 없었다. 군에 근무한 교수는 약 70명 정도였으며 특히 의과대학에서 군의 장교로 종군한 교수가 50여 명이나 되었다. 이승녕 교수의 증언에 따르면, 이희승 교수는 해군 문관으로, 권영대 교수는 해군 대령으로 근무했으며, 이선근 교수가 정훈국장이 되어 그 밑에서 많은 교수들이 전사 편찬에 참여했다고 한다. 또 의과대학 교수들은 육군이나 각급 기관 병원장으로 근무하였다(『대학신문』 1976년 10월 11일자).

〈표 2-3-1〉은 1951년 11월 현재 교직원 현황표이다. 이를 보면 군에 복무하지 않는 교직원이 115명으로 전체 재적 교직원 358명(법과대학 제외)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였다. 이중 군복무 교직원이 약 70명이었기 때문에 나머지 40여 명의 교직원은 다른 일에 종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 당시 재적 교직원 358명(법과대학 제외)은 1946년의 491명, 1950년 한국전쟁 직전의 650명에 비하면 크게 적다. 그만큼 많은 교직원이 피랍·월북·군복무 등의 사정으로 교단을 떠났음을 의미한다.

많은 인적 손실로 인한 교수 부족은 교수의 질적 저하까지 파생시켰다. 당시 아직 교수 자격에 대한 법제적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이들도 대학 교단에 서는 사례가 많았다. 이른바 ‘엥터리 대학교수’라는 말이 항간에 떠돌기도 하였으며, 이는 대학의 권위와 직결되어 많은 문제를 낳았다.

서울대학교에서 자격 미달자가 교단에 선 일은 없었지만, 교수들의 겸직이 문제가 되었다. 여러 사립대학교에서 필요한 교수를 확보하기 위해 타 대학 전임 교원을 자기 대학의 전임 교원으로 채용함에 따라 겸직 교수가 등장하였다. 겸직 교수 문제는 피난지에서 교수들이 생활 근거를 잃고 심한 생활난에 빠졌던 것과도 관련이 있다. 서울대학교도 많은 교수가 타 대학에 출강하였고 타 대학의 전임을 겸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겸

〈표 2-3-1〉 교직원 현황표(1951년 11월 현재)

(단위: 명)

대학	복무/비복무 직위	복무 중인 교직원					복무하지 않는 교직원					합계		
		교수	부 교수	조 교수	전임 강사	조교	소계	교수	부 교수	조 교수	전임 강사		조교	소계
대학원		1					1							1
공과대학		14	9	13	19		55	4	4	6	12		26	81
농과대학		5	2	7	10		24							24
수의학부			1	2	1	1	5				1		1	6
문리과대학		15	3	10	12		40	8	1	1	7		17	57
의예학부		1	1				2	1			1		2	4
법과대학		-	-	-	-	-	-	-	-	-	-	-	-	-
사범대학		13	2	8	5		28	3	1	2	1	1	8	36
상과대학		3		3			6							6
약학대학		2	1	3	4	1	11							11
예대미술부		4	1	4			9							9
예대음악부		5	3	2	3		13							13
의과대학		10	6	11	1	8	36	4	2	5	7	38	56	92
치과대학		5	1	1	4	2	13	4	1				5	18
합계		78	30	64	59	12	243	24	9	14	29	39	115	358

비고: 1. 이 현황표는 1951년 11월 문교부에 보고하기 위하여 각 단과대학에서 제출한 「국립서울대학교개요」라는 공문서를 분석하여 작성하였다.

2. 공과대학의 경우 이 표의 전임강사 수 가운데 10명 이상의 시간 강사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과대학 교직원 합계 81명 가운데 전임 교직원은 70명 내외였다.

3. 법과대학은 이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총합계 358명은 법과대학의 교직원을 고려하면 370명 이상일 것이다.

직 교수 문제는 한때 사회 문제가 되었으나, 1952년 6월에 전국총학장회의는 교수 부족과 교수들의 생활 문제를 고려하여 3, 4개 대학의 전임 교수를 겸직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으나 2개 대학의 겸직은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 2) 교수 임용 기준의 법제화와 증원

### (1) 교수 임면의 법제화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교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였고 이를 조급히 메우는 과정에 겸직 교수 문제 혹은 교수의 질적 저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는 당시 교수 임용 자격

요건이 법제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교수 인사 기준을 확립하는 일이 시급하였다.

정부는 1952년 4월에 ‘교육법시행령’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대학은 1개 학과에 교수와 부교수를 4인 이상, 조교수와 전임강사를 5인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교원의 수업 시간은 1인당 매주 9시간을 기준으로 하였다. 단 2개 학과를 초과하는 때에는 학과당 인원을 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법시행령으로 교원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은 정해졌으나 교원 임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었다.

교육 공무원의 자격·임용·보수·신분 보장·징계 등에 관한 기준은 1953년 4월 18일에 제정된 ‘교육공무원법’에 제시되었다. 그리고 이 법에 의거하여 ‘교육공무원징계령’(1953년 7월 6일), ‘교육공무원자격검정령’(1953년 10월 22일), ‘교육공무원임용령’(1953년 11월 1일), ‘교수자격인정령’(1953년 11월 13일) 등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법령에 의거하여 교원 임명 절차, 자격 기준, 신분 보장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면서, 서울대학교의 인사 행정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

먼저 교수 임명 절차에 교수회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규정하였다. 즉 교육공무원법 제 8조에서 부교수 이상의 교원을 임명할 때는 교수회의 동의를 얻게 하였다. 교수의 자격 기준은 다음 <표 2-3-2>와 같다.

교육 공무원의 신분 보장 문제를 살펴보면, 교육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보다 우대한다고 하였으며, 정년은 65세로 하였다. 또 형의 선고, 징계 처분 또는 교육공무원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휴직·정직·전직을 당하지 않으며, 교원 징계는 교육공무원특별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1953년 11월에 제정된 교육공무원임용령에 취득권 인정을 규정하여 “단기 4285년(1952년) 5월 6일 이전에 서울대학교 총장이 임명한 자”는 교수로 계속 근무할

<표 2-3-2> 1953년 현재 교수 임용 자격 기준

(단위: 년)

	학사학위 소지자 동등 자격자			초급대학 졸업자 동등 자격자		
	연구 실적 연수	교육 경험 연수	계	연구 실적 연수	교육 경험 연수	계
대학 교수	4	6	10	5	8	13
대학 부교수	3	4	7	4	6	10
대학 조교수	2	2	4	3	4	7
대학 강사(전임)	2	1	3	2	3	5

비고: 1. 연구 실적이라 함은 전문 학과 또는 관련 학과에 관해 대학, 기타 기관에서 수행한 연구를 말한다.

2. 교육 경험 연수와 연구 실적 연수는 서로 대치(代置)할 수 있다.

수 있게 하였다. 그런데 이 취득권은 법령 공포 당시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인정되었기 때문에 외국 유학 중이거나 종군 중인 교수들의 경우가 문제로 제기되었다. 유학 중인 경우는 일단 재직자로 규정할 수 있지만, 종군 중인 교수나 소재 불명의 교수들은 처리가 명확하지 않았다. 이에 서울대학교는 교육공무원임용령의 공포와 함께, 공고를 통하여 향후 1년을 기한으로 복직하도록 하고 일단 휴직 조치를 취하였다. 따라서 1년 안에 대학에 돌아오는 경우 취득권 인정으로 바로 복직되었지만, 그 기한을 넘기면 교수회의 동의를 얻어 신규 임용 절차를 밟아야 했다. 종군한 교수들은 의과대학이 가장 많았는데, 그중 대부분은 환도 이후 신규 임용 절차를 밟았다.

1955년 8월 4일에는 대학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대학의 시설 및 설비 등을 규정한 '대학설치기준령'이 제정되었다. 이 기준령에 규정된 교원 정원 1,165명을 확보하는 일이 큰 과제였다. 1958년에도 교수 총수는 교수와 강사를 합하여 477명에 불과하였다. 이와 같이 교원 수가 약 60%나 부족하여 후원회비로 시간 강사를 채용해야 하는 실정이었다. 당시 문리과대학 교원 실태를 살펴보면, 문리과대학의 법정 교원 수는 216명이고 그들이 담당해야 할 강의 시간 수는 연 9만여 시간이었다. 1959년 현재 국고 예산의 정원은 81명이며 이들이 담당하는 시간 수는 26,244시간이었고, 국고에서 부담하는 임시 강사의 시간은 약 7,500시간이었다. 따라서 부족한 시간은 약 6만여 시간으로 이에 소요되는 강사비는 총 5,400만 원이었다.

## (2) 교수 인사 제도의 변화와 증원

### ① 연구 실적 심사제와 명예 교수제 시행

1961년 9월 1일, 군사 정부는 국민 교육의 정상적인 질서를 확립하고 그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는 취지 아래 교육법과 교육공무원법 및 기타 법령에 대한 특별법으로 '교육에 관한임시특례법'(이하 '임시특례법')을 공포하였다. '임시특례법'에 따라 교수의 임명 절차가 변화하였고, 연구 실적 심사제와 명예 교수제가 시행되었다.

이전에는 교육공무원법에 의거하여 교수와 부교수는 교수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이 제청하면 문교부 장관을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명하였다. 그러나 '임시특례법'의 시행으로 교수회의 동의권을 폐지하고 총장이 제청하면 문교부 장관을 경유하여 내각 수반이 임명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연구 실적 심사제는 일정 연한만 지나면 학문적인 업적 여하에 상관없이 교수를 신규

채용하거나 승진시키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였다. 즉 국·공·사립대학을 막론하고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을 신규 채용하거나 승진시킬 경우, 연구 논문이나 저서를 문교부의 교수연구실적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도록 규정하였다. 처음에는 모든 교수의 신규 채용 및 승진 심사에 연구 성과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1963년 3월부터 부교수에서 교수로 승진할 경우는 예외로 하더니, 1964년 1월에 이르러서는 연구 실적 심사제를 완전히 폐지하였다.

명예 교수제는 각급 학교 교원의 정년을 65세에서 60세로 내리는 대신 정년 퇴직하는 교수 중에서 유능한 교수들이 계속 학교에 남아 학문 연구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였다. 문교부는 ‘임시특례법’에 의거하여 1961년 11월에 ‘명예교수규정’을 공포하여 명예 교수의 자격과 임명 절차를 규정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서울대학교는 1969년에 ‘서울대학교명예교수에대한세칙’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인사위원회가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던 자로서 재직 중 교육상, 학술상의 업적이 뛰어난 자를 선정하여 추천하면 문교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명예 교수로 임명하였다. 서울대학교는 1962년부터 1974년까지 모두 27명을 명예 교수로 임명하였다.

## ② 교수 임용 기준의 변경과 공개 채용 실시

1961년의 ‘임시특례법’으로 규제를 받던 교수 임명 절차는 이 법령이 폐지되고 1963년 12월 5일에 교육공무원법이 전문 개정되자 다시 변경되었다.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에 의거하여 서울대학교는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는 총장의 제청으로 문교부 장관을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여 여전히 교수회의 동의권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 대신 대학인사위원회를 두고 이 기구에서 임용 동의 및 기타 대학 교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게 하였다. 또 교원의 정년을 65세로 환원하였다. 교수 임용 자격 기준은 <표 2-3-2>의 1953년 기준과 동일하였다.

서울대학교는 1967년 1월에 ‘서울대학교교수임용에관한규정’을 제정하여 교원의 자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및 교수는 교육공무원법 제5조의 규정의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전입자 포함).

1. 박사학위 소지자.
2.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대학원 성적이 평균 2.50 이상인 자.



3.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출신 대학 최종 2개학년 성적이 평균 2.00 이상으로서 앞 제1호, 제2호에 상응할 만한 연구 실적이 있는 자.
4.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출신 대학의 학과 재적생 중 성적 순위가 고순위로부터 10% 이내에 해당되며 앞 제1호, 제2호에 상응할 만한 연구 실적이 있는 자.
5. 특수 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당해 분야의 연구 실적이 월등하여 앞 제1호, 제2호에 상응할 만하다고 인정된 자.
6. 전직자(본교에 한함) 중 퇴직 이후 연구 실적이 월등한 자로서 원직위(原職位) 이하로 재임용할 자, 다만 재직 당시에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비위 행위로 인하여 퇴직한 자는 제외한다.

이어 1967년 3월에 ‘서울대학교시간강사자격기준에관한규정’이 마련되어 시간 강사의 자격을 “대학 졸업자로서 교육 및 연구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나 초급대학 졸업자로서 교육 및 연구 경력이 5년 이상인 자와 문교부 장관이 전임강사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 규정하였다. 다만 담당 학과목의 성질상 위와 같은 자격을 가진 자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나 해당 분야의 권위자로서 교육 및 연구 경력이 10년 이상일 때는 특별히 융통성을 부여하였다.

한편 1974년 3월에 서울대학교 최초로 교수 공개 채용(이하 공채)이 이루어졌다. 공과대학 교수회는 날로 새로워지는 공학 이론을 포용하고 공업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젊고 유능한 교수들을 채용한다는 취지에서 교수 공채를 결정하였다. 채용 대상은 공과대학 17개 학과에 부교수 및 조교수 30명이었으며, 응모 자격은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였다. 채용 방법은 서류 전형과 연구 실적 심사를 통과한 응모자를 대학전형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다시 해당 학과의 교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것이었다. 1974년 6월에는 의과대학도 교수 공채 계획을 발표하였다. 의과대학의 공채 인원은 해부학, 생리학 등 13개 부문 13명이었다. 시행 결과 1974년에 공과대학이 조교수 9명, 의과대학이 조교수 1명과 전임강사 5명을 공개 채용하였다. 그 후 교수 공채 제도는 종합화 실시와 함께 전교로 확대 실시되었다.

### ③ 교원 승진 기준의 변경

교원의 직급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및 조교로 구분하였다. 교원의 승진 자격 규정에 의하면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연구 경력이 3년이면 강사로, 4년이면 조교수로, 7년이면 부교수로, 10년이면 교수로 각각 승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였다. 그

런데 서울대학교에는 승진할 자격을 갖추고도 직급별 정원 제한으로 승진하지 못한 교직원이 상당하였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1964년 11월 26일에 ‘국가공무원정원령’을 개정하여 공포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대학교는 부교수 83명이 교수로, 조교수 24명이 부교수로, 전임강사 84명이 조교수로, 조교 25명이 전임강사로 각각 승진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직급별로 정원을 제한하였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였다. 서울대학교의 교수 정원 962명 중 교수와 부교수 475명, 조교수와 전임강사 487명으로 직급별로 정원을 규정하여, 하위 직급인 조교수와 전임강사가 정교수가 될 수 있는 교육 연한과 연구 경력을 가진 경우라도 상위 직급의 교수 정원이 없어 승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1971년 9월에 ‘각급학교에두는 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을 개정하였다. 이 규정은 전임강사 이상부터 교수까지의 정원을 962명, 조교 정원을 153명으로 정하고, 교수 정원 962명 중에서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교수 등 각 직급별 정원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각 직급 사이의 정원 비율과 합리적인 승진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였다. 서울대학교 인사위원회는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각 1명과 교수 3명 및 교무처장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여러 차례 모임을 갖고 연구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현행의 4직급을 잠정적으로 유지하되 종합화 계획이 본궤도에 오름에 따라 차차 3직급제로 하며 원칙적으로 박사학위 소지자로 교원을 구성한다.
2. 전임강사와 조교수에 대한 기한부 고용 계약 제도를 채택한다.
3. 승진은 각 단과대학에 설치된 평가위원회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대학의 학장이 총장에게 추천하기로 한다.
4. 각 대학에 업적 및 자격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직급별 정원제의 철폐에 따른 상위 직급으로의 편중화를 막기 위해 업적 평가를 엄격히 실시한다.
5. 현행의 직급별 정원제는 철폐하여 직급별 배정을 개방시키되 임용 제도를 엄격히 규제 강화한다.

이 연구 보고서는 교수의 승진 및 임용에 경력과 연구 업적을 점수제로 평가하여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그 요건은 <표 2-3-3>과 같다.

〈표 2-3-3〉 직급별 경력 및 업적 요건(1971년 현재)

	경력 요건			연구 업적(논문)
	박사	석사	학사	
대학교수	6년	9년	11년	10편
대학 부교수	3년	6년	8년	7편
대학 조교수	-	3년	5년	3편
대학 전임강사	-	1년	3년	2편

비고: 경력 연한에 있어 박사학위는 5년, 석사학위는 2년으로 간주하였다.

평가 기준은 경력 점수를 학사(0.3), 석사(0.5), 박사(1)로 구분하여 계산하고 연구 업적은 학술 논문을 A(3), B(2), C(1)로 구분하여 계산하기로 하였다. 경력과 연구 업적 기준으로 한 점수 평가제는 원칙적인 면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었다. 그렇지만 연구 보고서는 다양한 학문 분야를 일괄적으로 취급하여 원칙적인 방향과 잠정적인 구체안을 제시한 데 불과했으므로 이를 각 분야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기는 곤란하였다. 특히 학문적 성격이 다른 인문사회계와 예능계를 자연계와 동일한 기준으로 취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였다.

이에 1972년 4월 인문사회계와 예능계의 소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었다. 인문사회계의 소위원회는 5월에 연구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는 인사위원회 산하 소위원회의 방안과는 달리, 박사학위 소지자는 임용할 때만 우대하고 정규 교직원의 직급은 현행 제도와 같이 4직급제로 하되 이를 다시 영구직과 계약에 의한 임시직으로 나누었다. 즉 전임강사는 1년 계약제로 하여 3회까지 갱신하고 조교수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신규 임명 절차를 밟도록 하였으며, 조교수의 최초 2년 간은 계약제로 하였다.

예능계의 소위원회는 6월에 연구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현행 직급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일부 직급에 계약제를 채택하였으며, 예능계에는 박사학위가 보편화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석·박사학위는 임용할 때만 우대하기로 결정하였다. 임용 및 승진에 필요한 경력 연한과 연구 업적은 인문사회계와 같았으나, 상위 직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규정된 경력 연한과 연구 업적 외에 현 직급에 2년 이상 재직하고 최저 2편의 논문이나 이에 해당하는 작품 연구 업적을 수행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문교부가 대학에 일임하였던 교수 승진의 대학 자율 규제 방침을 철회함에 따라 이 방안들은 빛을 보지 못하고 말았다. 그 후 1973년 7월, 문교부는 각 대학에 '대학교원인사관리기준'을 통보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승진에 필요한 연한은 전임강사에서

조교수가 4년, 조교수에서 부교수가 4년, 부교수에서 교수가 5년이였다. 아울러 직급별 인원은 교수·부교수를 50% 이내, 조교수·전임강사를 50% 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표 2-3-4〉 교직원 수의 변동

(단위: 명)

연도별 정원 소속 기관	1962		1967		1972	
	정원	현 인원	정원	현 인원	정원	현 인원
본부	2	1	8	1	20	2
대학원	1	1	2	2	1	1
경영대학원	-	-	2	-	6	3
교육대학원	-	-	2	-	10	9
보건대학원	5	2	8	5	20	19
사범대학원	-	-	2	-	9	8
행정대학원	17	7	16	15	20	17
공과대학	88	80	129	115	142	135
농과대학	83	80	104	97	123	118
문리과대학	86	80	128	111	161	154
미술대학	15	13	23	19	27	26
법과대학	24	20	27	23	26	24
사범대학	63	52	80	78	98	88
상과대학	27	18	38	34	44	40
약학대학	19	19	28	25	34	29
음악대학	17	16	31	27	42	41
의과대학	102	94	124	116	146	142
치과대학	20	19	36	34	57	51
가정대학	-	-	-	-	13	11
교양과정부	-	-	-	-	81	74
부속도서관	-	-	-	-	2	2
생약연구소	3	3	9	8	11	11
신문연구소	-	-	2	-	-	-
어학연구소	-	-	6	4	9	8
학생지도연구소	-	-	5	3	9	9
법학연구소	-	-	3	3	6	6
재외국민연구소	-	-	-	-	5	-
합계	553	505	813	720	1,122	1,028

출전: 『통계연보』, 각년도판.

비고: 교직원에는 조교도 포함.

〈표 2-3-5〉 단과대학별 교수 대 학생 비율(1970년 6월 30일 현재)

(단위: 명)

	교수	학생	비율		교수	학생	비율
공과대학	110	2,880	1:26.2	약학대학	23	315	1:13.7
농과대학	102	1,284	1:12.6	음악대학	33	495	1:15.0
문리과대학	121	2,509	1:20.7	의과대학	122	720	1:5.9
미술대학	22	283	1:12.9	치과대학	43	338	1:7.9
법과대학	22	705	1:32.0	가정대학	4	177	1:44.3
사범대학	72	1,396	1:19.4	교양과정부	51	2,560	1:50.2
상과대학	35	903	1:25.8	합계	760	14,565	1:19.2

출전: 『통계연보』, 1970년도판

비고: 교수 수는 1970년 6월 30일 현재, 학생 수는 1970년도 1학기 등록생 수.

하였다.

#### ④ 교원 증원

교원을 충분하게 확보하는 일은 대학 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다. 따라서 서울대학교는 유능한 교수를 확보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고, 그 결과 5·16 쿠데타 이후 제정된 ‘대학정비령’으로 학생 정원은 격감하였으나 교원 수는 계속 증가하였다. 1962년 이후 교원 수의 증가 추세를 정리하면 〈표 2-3-4〉와 같다.

〈표 2-3-4〉와 같이 교수 수는 계속 증가하였으나 대학 교육의 내실화를 꾀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였다. 1970년에 단과대학별 교수 대 학생의 비율은 〈표 2-3-5〉에 나타난 바와 같이 1:19.2였다. 이 비율은 미국의 주립대학들(1:16~1:20)보다는 약간 낮은 편이지만 미국의 사립대학들(1:12~1:13)이나 영국(1:1.6)의 경우보다는 훨씬 높고, 가까운 일본의 도쿄대학(1:7.9)에 비해서는 2배 이상이었다. 특히 공과대학, 법과대학, 상과대학, 가정대학은 1:25가 넘었고, 교양과정부는 1:50.2이나 되었다.

### 3) 교수 공개 채용 제도 확대와 재임용제 실시

#### (1) 교수 공개 채용 제도의 확대

교수 공채 제도는 1974년에 공과대학이 처음 채택한 후 의과대학과 자연과학대학 등 일부 대학에서 부분적으로 시행하였다. 교수 공채 제도는 새로운 학풍을 진작하고 국내

외 우수한 학자들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되어 1976년부터 전교로 확대되어 실시되었다.

교수 공채 제도를 실시하게 된 배경으로는 첫째, 실험 대학 운영과 대학 특성화 계획의 목표인 대학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능력 있는 전임 교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 둘째, 급격한 산업화와 함께 자연계 교수 지망생들이 산업체나 다른 연구 기관으로 진출하여 교수 인력이 부족하게 된 점을 들 수 있다.

서울대학교는 1976년 12월 3일에 ‘서울대학교전임교수및조교임용규정’을 제정하여 교수 공채를 제도화하였다. 1967년에 제정된 ‘서울대학교교수임용에관한규정’을 변경하여 ‘공채’를 명문화함과 동시에 임용 자격을 대폭 강화하였고 연구 실적 심사 제도를 개선하였다.

신규 교수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임용하였다. ① 총무과에서 각 기관별로 결원을 조사하고, ② 각 기관장은 전공 분야별 소요 인원 및 자료를 총장에게 제출하며, ③ 교과과정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심사한 후, ④ 신문에 공고하여 응모 서류를 접수한 다음, ⑤ 연구 실적 심사 위원 3인(학내 2인, 학외 1인 또는 학내 1인, 학외 2인)을 위촉하여 연구 실적을 심사하고, 단과대학의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에서 규정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하며, ⑥ 대학인사위원회(본부)에 부의하여 통과되면, ⑦ 총장은 문교부와 사전 협의(조교수 이상일 경우)를 거쳐 임명을 제청하였다. 이후 교수 임용 후보자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임용 절차가 완료되었다.

임용 자격은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되, 석사학위 소지자는 대학원 성적 평균이 3.0 이상(종전 2.5)이고, 출신 대학 3·4학년 성적 평균이 3.0 이상이거나 해당 대학 해당 학과 해당 학년 내에서 성적이 고순위로부터 10% 이내인 자(이상 신설), 학사학위 소지자는 출신 대학 3·4학년 성적 평균이 3.0 이상이거나(신설), 고순위 10% 이내인 자로 제한하였다.

연구 실적에 대한 심사 기준은 대폭 개선하였다. 신규 임용 시에 인정받을 수 있는 연구 실적은 최근 3년 이내에 제출하여 통과된 박사학위논문 또는 2년 이내 발표된 200% 이상의 논문이나 저서로 설정하였다. 연구 실적은 200자 원고지 100매(단, 계량 분석 계열과 자연 과학 계열은 제외) 이상의 전공 분야에 관한 논문으로 저서, 학위논문, 학회지, 논문집, 정기 간행물 등에 발표된 것으로 하고, 이는 점수제에 따라 단독 연구와 석사학위논문은 100%, 공동 연구는 30~70%, 박사학위논문은 200%로 환산하였다. 예체능계는 연구, 발표, 전시, 입선 등을 모두 연구 실적물로 인정하였고, 환산 비율은 별

<표 2-3-6> 신규교수 채용 인원(1976~1993년)

(단위: 명)

연도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인원	39	31	41	44	61	83	89	45	48	72	59	49	46	27	31	37	51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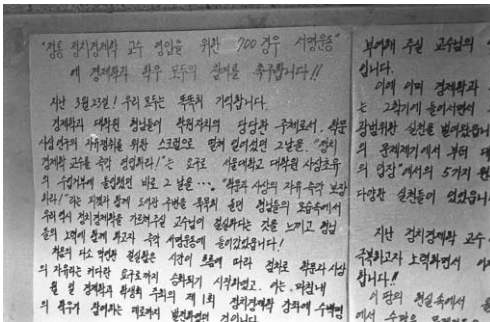


그림 2-3-1 정치경제학 전공 교수 영입 요구 대자보

도로 마련하였다.

대학인사위원회는 ① 모집 분야의 합당 여부, ② 박사학위 소지 여부, ③ 조교수 40세 이하, 전임강사 35세 이하의 연령 기준(1980년 이후에는 각각 35세, 30세 미만으로 변경), ④ 대학 재학 성적, ⑤ 상위직 역제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교수 임용 후보자를 심사하였다.

정부는 1981년 11월 23일에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하여 교수 임용에 관한 사항을 다시 변경하였다. 이에 따르면, 교수와 부교수는 이전과 같이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의 제청으로 문교부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였으나, 조교수는 총장의 제청으로 문교부 장관이, 전임강사와 조교는 총장이 임용하도록 하였다. 물론 조교수와 전임강사, 조교의 임용에도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는 필요하였다.

1976년부터 1993년까지 신규 교수 채용 상황은 <표 2-3-6>과 같다. 1980년대 초반은 졸업 정원제 시행에 따라 학생 정원이 증가하면서 교수 인력도 많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신규 교수 채용 인원도 많이 증가하였다.

한편 대학원생 등이 교수 임용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특정 분야 교수의 신규 채용을 주장하는 이례적인 일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1988년 3월에 경제학과 대학원생들은 정치경제학 전공 교수의 임용을 요구하며 집회를 가지는 등 집단적으로 의사를 표현하였고, 서울대학교는 이를 수용하여 1988년 2학기에 정치경제학 전공 교수를 임용하였다.

### (2) 교수 재임용제 실시

정부는 1975년 7월에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하여 교수 재임용제를 실시하였다. 대학 교원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고, 이후 심사를 통해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교수 및 부교수는 6년에서 10년(1980년 이후 교수·부교수 6년), 조교수 및 전

임강사는 2년에서 3년, 조교는 1년을 임용 기간으로 하였다. 현직 대학 교원은 1976년 2월 말까지 기간을 정하여 재임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재임용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학에 ‘교수재임용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교수 재임용제의 취지는, 당시 대학교원 인사 제도가 연공 서열제로 소정의 근무 연한만 경과하면 자동으로 승진하여 정년까지 근무하는 안일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여 대학 교육의 질적 향상과 우수한 교원을 확보한다는 것이었다.

교수 재임용 절차를 보면, 먼저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교수 이상 교원 중에서 총장의 제청으로 문교부 장관이 임명한 위원 15인 이내로 교수재임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교수재임용심사위원회는 각 교원의 최근 10년 간을 심사하였는데, ① 연구 실적 및 전문 영역의 학회 활동, ② 학생에 대한 교수(강의), 연구(지도) 및 생활 지도 능력과 실적, ③ 교육 관계 법령의 준수,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등이 심사 기준이었다. 이 가운데 두 번째 항목이 심사 기준에 포함되어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며, 특히 세 번째 항목의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라는 모호한 기준은 심사위원회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정부에 대해 고분고분하지 않은 교수를 배제하기 위한 독소 조항이라는 비난이 일었다. 이에 1979년 ‘10·26 사태’ 이후 학사조정위원회와 교수협의회는 재임용제 폐지를 건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5·17 쿠데타가 발발한 이후, 1980년 7월 25일에 문교부는 ‘대학학사운영정상화방안’을 발표하면서 교수 재임용제는 더욱 강화되었다. 문교부는 다음과 같은 심사 평정 기준을 시달하였다.

1. 기본적 자질, 학문 연구 능력과 실적, 수업(강의) 능력과 실적, 학생 지도 능력과 실적, 국가 사회에 대한 기여도, 근무 상황, 기타 사항 등 7개 영역 30개 평정 항목으로 세분하여 심사.
2. 연구 실적률: 최근 2년 이내(재임용일 기준, 추후 조교수 이상 3년, 전임강사 2년) 200% 이상.
3. 학생 지도 및 수업 상황은 학생처 및 수업과 자료에 의거 심사하고, 법령 준수 및 기타 사항은 해당 부서 자료에 의거 심사.

각 단과대학별로 단과대학 인사위원회가 ①의 사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면, 단과대학에서 다시 심의하여 본부에 재임용을 추천하고, 본부는 대학별 심사 결과와 본부의 각과 관련 자료(수업 실적, 학생 지도, 시험 감독 및 성적 정정, 해외 여행 허가 기



간 준수, 경고 또는 주의, 법규 준수 및 제 규정 이행 등)를 종합 심사하여 본부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재임용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였다.

교수 재임용제는 교수의 자질 향상과 교육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교수 공채 제도와 더불어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교수의 연구와 강의 이외의 요소가 지나치게 높은 비중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운영 과정에서 재임용제를 악용할 가능성이 농후하였다. 실제 문교부는 재임용제를 통하여 학생 지도와 학사 운영을 획일적으로 통제하고, 교육 내용과 연구에도 간섭과 통제를 가하였다. 또한 학생 지도를 재임용과 승진 임용에 연계시킴으로써 학원 분위기를 경직시켰다.

### (3) 명예 교수제의 변동

1979년부터 명예 교수제가 약간 변동되었다. 서울대학교 퇴임 교수 중 학문적 업적이 탁월한 교수를 명예 교수로 추대하였는데, 종전의 명예 교수 추대 제도는 다분히 업적 중심이어서 서울대학교의 교육을 위하여 평생을 바친 정년 교수가 누락되는 현상이 심하였다. 1962년부터 1974년까지 27명이 추대된 이후 새로 추대된 교수가 없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1979년 4월 20일에 ‘서울대학교명예교수에관한세칙’이 개정되었다.

먼저 추대 자격을 서울대학교에서 전임강사 이상 교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 퇴직한 자와 20년 이상 근무하고 교육상, 학술상 업적이 현저한 자로 이원화하였다. 종전에 15년 이상 근무하고 교육상, 학술상 업적이 현저한 자로 규정하였던 것에 비해 실질적으로 범위가 넓어진 것이다. 또한 해당 대학의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하던 것을 소속 단과대학의 교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학장이 총장에게 추천하도록 개정하였다. 그리고 명예 교수의 정원 규정을 신설하여, 매 학년도 초 전임강사 이상 교원 정원의 20% 이내로 정원을 제한하였다.

1988년에도 세칙을 개정하여 명예 교수로 추대될 수 있는 자격 범위를 확대하였다. 제2조 2항을 신설하여 명예 교수로 추대될 수 있는 자격 요건에 “본교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으로 25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당시 총장 또는 교수인 자로서 본교 발전에 공헌이 뚜렷한 자”라는 조항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제2조 자격 조항에 “가. 본교에 전임강사 이상으로 30년 이상 재직한 자, 나. 본교에 전임강사 이상으로 20년 이상 재직하고 그 재직 중 교육 및 학술상의 업적이 현저하거나 본교 발전에 공헌이 뚜렷한 자”에 대한 제한 조건으로 “정년 또는 신체상의 장애로 인하여 퇴직한 자 중 퇴직 당시 총장 또는 교수인 자”를 추가하여 명예 교수로 추대될 수 있는 자격 범위를 넓혔다. 그 결과 의원면

〈표 2-3-7〉 명예 교수 추대 현황(~1990년)

(단위: 명)

연도	퇴직자 수			명예 교수 추대자 수
	정년 퇴직	의원면직	소계	
1979년 이전	84	-	84	50
1980	12	2	14	13
1981	12	3	15	9
1982	6	6	12	2
1983	11	4	15	10
1984	19	2	21	18
1985	12	3	15	-
1986	20	4	24	5
1987	24	2	26	25
1988	27	5	32	32
1989	21	1	22	20
1990	17	2	19	17

직된 교수들이 명예 교수로 추대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후 많은 전직 교수들이 명예 교수로 추대되었다. 그 결과 서울대학교를 정년 퇴직한 교수가 명예 교수로 추대되는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였다.

명예 교수 추대 상황은 위의 〈표 2-3-7〉과 같다.

#### 4) 교수 정년 보장 제도의 시행과 업적 평가 강화

##### (1) 신규 임용과 교원 현황

서울대학교는 1994년 11월 2일에 서울대학교전임교수및조교임용규정을 개정하여, 신규 임용한 교수·부교수에 대해 채용 당시 심사를 거쳐 정년을 보장하거나 임용 기간을 3년으로 하도록 하였다. 이는 신규 채용 시 교수·부교수에 대해 임용 전의 교육 업적, 연구 경력을 심사하지 않고 정년을 보장한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취지에서 만든 것이었다. 이에 따라 신규 채용 시 임용 기간이 3년인 교수·부교수에 대해서는 3년 후에 다시 심사하여 정년을 보장하였다. 이 개정안은 1996학년도 신규 임용부터 적용하였고, 전임강사와 조규수의 신규 임용에 대해서는 전과 같이 각각 2년, 4년의 기

간을 거친 뒤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였다. 1997년 5월 13일에 서울대학교전임교수및조교임용규정을 다시 개정하였는데, 교수 업적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실적 심사 위원이 그 범위를 정할 수 있게 한 것 이외의 큰 변화는 없었다.

1999년 1월에 정부가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함으로써 교수 신규 임용 제도에 몇 가지 변화가 있었다. 첫째, 첨단 과학 기술 분야 또는 외국어 분야 등에 우수한 외국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을 대학의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게 하였고, 둘째, 신규 채용 시 특정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편중되지 않도록 규정하였으며, 셋째, 근무 기간, 급여, 근무 조건, 업적 및 성과 조건 등 계약 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울대학교는 이를 반영하여 2000년 2월 3일에 서울대학교전임교수및조교임용규정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으로 공개 채용의 심사 기준·심사 단계·심사 방법을 강화하였고 특별 채용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신규 채용 후보자의 임용 유예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였고, 연구 실적물과 인정 환산율을 조정하였다.

교육부가 특정 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에 대한 교수 채용 비율을 제한하자 서울대학교는 반대 의견을 표명하였다.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인위적으로 서울대학교 학사 출신을 50% 이하로 뽑게 된다면 우수한 연구 인력의 확보가 어려워져 교수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는 취지였다. 이를 수렴하여 교육부는 1999년 9월에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대학 교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특정 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모집 단위별 신규 채용 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다만 신규 채용된 교원이 해당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했다 하더라도, 해당 학사학위의 전공 분야와 다른 분야에 채용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한편 정부는 대학의 교원 임용에서 양성 평등을 제고하기 위해 2003년 7월 25일에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국·공립대 총장은 필요한 임용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대학의 교원 임용 계획과 그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대학인사위원회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은 여성으로 하도록 하였고, 총장은 교원 임용이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3년마다 계열별 임용 목표 비율이 명시된 임용 계획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이 추진 실적을 매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또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는 계획 및 그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2004년 3월 26일에 개정된 서울대학교전임교수및조교임용규정에서는 연구 실적물에 대한 심사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늘려 심사의 공정성을 높였고, 연구 실적물 제출 건수 제한 기준인 총 합산 점수는 300점에서 400점으로 확대하여 응모자들의 연구 업적을 좀더 포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1991년부터는 신규 채용 교수들에게 연구비를 지급하였다. 신입 교수에 대한 연구비 지원은 신입 교수의 연구 활동을 진작하고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한 것이었다. 1인당 300만 원에서 350만 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1992년부터 신규 채용 교수에게 서울대학교의 각종 제도, 시설 등을 안내하여 서울대학교의 연구 및 교육 분위기를 알리기 위해, '신규 임용 교원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워크숍은 서울대학교 본부 부처의 업무 소개, 각종 제도 및 규정 소개, 캠퍼스별 중요 시설 견학, 원로 교수와의 대화, 총장·부총장·처·실·국장과의 대화, 신입 교수 상호 간의 대화 등으로 구성하였다. 이는 신입 교원에 대한 학교 자체의 소개 프로그램이 없는 관계로 이들이 서울대학교에서 연구 활동과 교육 활동에 익숙해지는 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마련한 것이었다.

1994년부터 2005년까지 각 단과대학(원)별 신규 교수 임용 상황은 다음의 <표 2-3-8>과 같다.

한편 1996년부터 2005년까지 신규 임용된 전임 교원의 성별 분포와 최종 학위 취득 상황은 <표 2-3-9>와 같다. 2000년 이후 교육부가 특정 대학 학사학위 소지자에 대한 교수 채용 비율을 제한하고, 임용과정에서 양성 평등을 제고하기 위해 일정 비율 이상을 여성으로 임용하도록 한 방침에 따라, 실제 임용에서도 그와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여성 교수 비율은 2001년부터, 그리고 학사학위를 타과나 타교에서 취득한 교수의 비율은 2002년부터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표 2-3-9>에서 볼 수 있듯이 신규 임용 교수의 최종 학위의 취득 국가는 서구, 특히 미국에 편중되어 있다. 1996년부터 2005년까지 신규 임용된 교수 785명 중 국내에서 최종 학위를 취득한 교수는 270명으로 34%에 불과하였다. 국어국문학과, 국사학과 등 일부 학과와 의과대학을 제외하면 외국에서 최종 학위를 취득한 교수의 비율은 더욱 높다. 이는 학문 연구의 국제화에 기여하는 측면도 존재하나,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학문 연구의 편협성과 의존성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 또 1970년대 후반 이후 서울대학교가 추진해 온 대학원 중심 대학·연구 중심 대학의 목표가 교수 요원을 배출해 내는 학문적으로 자기 완결적인 대학을 만들어내는 데 있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교수

〈표 2-3-8〉 단과대학(원)별 신규 교수 임용 상황

(단위: 명)

대학	연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인문대학	5	5	10	2	7	12	2	5	3	22	10	4	
사회과학대학	3	4	3	2	4	2	3	7	8	8	5	5	
자연과학대학	6	3	1	8	13	5	3	7	2	21	20	6	
간호대학	1				1				1		1		
경영대학	1		1	4	2	1	1	2	3	3	6	2	
공과대학	15	9	15	18	10	13	4	9	4	23	24	11	
농업생명과학대학	2	2	4	4	7	6	2	5	4	6	7	9	
미술대학	2		1		2	3		2	2	3	4	1	
법과대학		4	1	5		3		2		7	3	1	
사범대학	3	5	3	4	1	5	3	6	8	9	8	6	
생활과학대학				2	1			1		2	2	1	
수의과대학	2	4	1	3		3	2	1	3	2	1	1	
약학대학	2	2	2			1	1	1	1	2	2	5	
음악대학	5	6			5	3	1	2	1	5	2	3	
의과대학	12	9	6	16	10	1	7	5	9	18	17	16	
치과대학	5	4	5	4	1	5	3	1	4	25	6	6	
보건대학원				1	1		2	1	3	2	1	1	
행정대학원	3	1		2		1		1	1	2	3	1	
환경대학원	1				1					3		4	
국제대학원					2		2		4	5	4	1	
천연물과학연구소							2						
합계	68	58	53	75	68	66	36	58	61	168	126	84	

출전: 『대학백서』 각년판

양성의 해외 의존 심화는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없다.

그러나 1990~1994년 2월 사이에 신규 임용되었던 교수 304명 중 국내대학에서 최종 학위를 취득한 교수가 18명으로 10%대 초반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편중 현상은 상당히 완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역시 위에서 말한 연구 중심 대학이라는 추진 목표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어 국내 대학들의 교육 여건이 개선되어 가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다.

교수의 최종 학위 취득이 외국 대학에 편중된 상황은 〈표 2-3-10〉 2005년 12월 31일 현재 재직교원 최종 학위 취득 국가 현황에도 나타난다.

이를 보면 외국에서 최종 학위를 취득한 비율은 65%로 국내의 35%를 훨씬 상회하고

<표 2-3-9> 신규 임용 교수의 성별 분포와 학위 취득 상황(1996~2005년)

연도	구분	신규 채용 인원		성별				학사			최종학위																															
		남	여	본과	서울대		타교		국내			외국																														
					본과	타교	국내	국외	미국	독일	캐나다	러시아	프랑스	영국	일본	호주	벨기에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웨덴	스페인																					
																						사범대	타교	서울대	타교	미국	독일	캐나다	러시아	프랑스	영국	일본	호주	벨기에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웨덴	스페인				
1996	53	49	4	45	6	1	1	18		28	4	1	1	1																												
1997	62	59	3	49	12		1	15	1	39	2										2	3																1				
1998	71	63	8	59	7	2	3	16	2	43	3	1									2	2	1																			
1999	66	62	4	56	7	1	2	17	2	34	6	1									3	1	2																1			
2000	36	34	2	28	7	1		12		18											1	3	1																1	1		
2001	58	50	8	45	7	3	3	11	4	33	1	1									2	2		1			1													1		
2002	61	51	10	31	18	10	2	23	5	28	2										1																					
2003	168	147	21	96	40	28	4	60	9	74	12			1							2	3	7																			
2004	126	91	35	74	31	18	3	37	7	70	3	1									2	4	2					1												1	1	2
2005	84	67	17	45	14	20	5	24	7	44	3	1									1	2	2																			
계	785	673	112	528	149	84	24	233	37	411	36	6	2	13	19	20	2	1																								

출전: 교무과 제공 자료

비고: 국내·외 학위소지자는 국내학위에 포함.

〈표 2-3-10〉 재직교원 최종학위 취득국가 현황(2005년 12월 31일 현재)

대학(원)	국별	국내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영국	캐나다	스페인	홍주	오스 트리아	이탈 리아	러시아	벨기에	스웨덴	계
인문대학		61	59	22	1	14	2		5		1		2			167
사회과학대학		9	90	4	1	1	5			3					1	114
자연과학대학		21	160	5		3	5	7		1			1			203
간호대학		13	5													18
경영대학		4	38					1								43
공과대학		43	232	9	6	5	6	1								302
농업생명과학대학		15	79	1	11	1	1			2						110
미술대학		13	16	2	1		2									35
법과대학		10	11	14	1	2	3									41
사범대학		28	61	6	3	5	1	2								106
생활과학대학		6	19		2											27
수의과대학		17	11		7		1	1		1						38
약학대학		5	31	1	7											44
음악대학		6	18	8		3	1									42
의과대학		273	7		1						2	3		1		281
보건대학원		7	13				1									21
행정대학원			22	1		1	1									25
환경대학원		1	20													21
국제대학원		2	11		2	1	1									17
치의학대학원		76	9	3	1		1									90
계		610	912	76	44	36	31	12	5	7	3	3	2	2	2	1,745
비율(%)		35.0	52.3	4.4	2.5	2.1	1.8	0.7	0.3	0.4	0.2	0.2	0.1	0.1	0.1	100.0

출전: 교무과 제공 자료  
비고: 국내·외 학위소지자는 국내학위에 포함.

〈표 2-3-11〉 교원 현황(2000~2005년)

(단위: 명)

연도	구분	전임 교원					기타 교원						계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 강사	소계	명예 교수	기금 교수	시간 강사	조교	계약제(BK21) 교수	소계	
2000	남	878	276	203	23	1,380	376	117	771	295	5	1,564	2,944
	여	68	16	14	5	103	14	15	381	115		525	628
	소계	946	292	217	28	1,483	390	132	1,152	410	5	2,089	3,572
2001	남	876	302	174	17	1,372	401	135	728	287	42	1,593	2,965
	여	66	20	14	2	102	16	17	558	130	21	742	844
	소계	942	325	188	19	1,474	417	152	1,286	417	63	2,335	3,809
2002	남	901	322	130	14	1,367	468	123	1,282	272	69	2,214	3,581
	여	69	21	13	4	107	19	17	614	141	29	820	927
	소계	970	343	143	18	1,474	487	140	1,896	413	98	3,034	4,508
2003	남	907	361	146	26	1,440	539	102	834	270	54	1,799	3,239
	여	69	26	23	7	125	27	17	551	146	26	767	892
	소계	976	387	169	33	1,565	566	119	1,385	416	80	2,566	4,131
2004	남	928	378	181	37	1,524	497	97	695	245	62	1,596	3,120
	여	75	26	38	11	150	23	15	496	168	22	724	874
	소계	1,003	404	219	48	1,674	520	112	1,191	413	84	2,320	3,994
2005	남	953	373	198	25	1,549	524	142	730	231	54	1,681	3,230
	여	76	33	52	10	171	24	19	546	177	14	780	951
	소계	1,029	406	250	35	1,720	548	161	1,276	408	68	2,461	4,181

출전: 『대학백서』 각년판

있다. 1995년에는 외국에서 최종 학위를 취득한 비율이 57.7%였으나 그 비율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이는 외국 유학의 기회가 적었던 세대 교수들이 퇴직하고 그 자리를 외국 유학 출신들이 메웠던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00년 이후 서울대학교의 교원 현황과 교수 1인당 학생 수는 다음 〈표 2-3-11〉, 〈표 2-3-12〉와 같다.

교수 1인당 학생 수의 추이를 보면, 1987년 이후 대략 1:20~22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다가, 최근 교수 수가 증가하고 학부 정원이 감소하면서 1:18까지 개선되었다. 그런데 대학원의 경우는 정원이 증가하면서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더욱이 대학원의 경우 이 수치는 등록생만을 포함할 뿐이고 수료 후 논문을 작성하고 있는



〈표 2-3-12〉 전임 교수 수, 학생 수와 교수 1인당 학생 수의 변화(1987~2005년)

(단위: 명)

구분 \ 연도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전임 교수 수		1,276	1,291	1,313	1,320	1,323	1,344	1,333	1,390	1,417	1,419
학사	학생 수	21,909	21,574	21,364	20,441	19,967	20,161	20,420	21,514	22,192	23,019
	교수 1인당 학생 수	17.1	16.7	16.2	15.5	15.1	15.0	15.3	15.5	15.7	16.2
대학원	학생 수	6,597	6,683	7,173	7,307	7,533	7,970	8,012	7,937	7,826	8,021
	교수 1인당 학생 수	5.2	5.2	5.5	5.5	5.7	5.9	6.0	5.7	5.5	5.6
전체	학생 수	29,580	28,506	28,537	27,748	27,520	28,131	28,432	29,451	30,018	31,040
	교수 1인당 학생 수	22.3	21.9	21.7	21.0	20.8	20.9	21.3	21.2	21.2	21.8

구분 \ 연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전임 교수 수		1,442	1,472	1,484	1,483	1,474	1,474	1,565	1,674	1,720
학사	학생 수	22,818	23,039	22,522	22,213	22,953	22,581	22,237	21,517	20,422
	교수 1인당 학생 수	15.8	15.6	15.2	14.9	15.5	15.3	14.2	12.9	11.9
대학원	학생 수	8,490	9,076	9,272	9,601	9,331	9,477	10,139	10,455	10,637
	교수 1인당 학생 수	5.8	5.4	6.2	6.4	6.3	6.4	6.5	6.2	6.2
전체	학생 수	31,308	32,115	31,794	31,814	32,284	32,058	32,376	31,972	31,059
	교수 1인당 학생 수	21.7	21.8	21.5	21.4	21.9	21.7	20.7	19.1	18.0

출전: 『대학백서』 각년판, 『통계연보』 각년판

학생 수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다. 또 현행 제도 하에서는 대학원과정 학생에게 학사과정 학생의 1.5배의 가중치를 두고 전임 교수의 법정 정원을 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대학원과정 학생의 가중치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대학원생 증가에 따라 학위논문 지도의 부담이 급격하게 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면, 앞으로 전임 교수 확보에 좀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2) 교수 재임용제와 교수 정년 보장제의 병행 실시

교육부는 1991년 3월에 교육공무원법 제11조 3항을 “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같은 해 8월에는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여 교수 및 부교수는 정년까지 임용하고, 조교수는 4년, 전임강사는 2년의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도록 하였다. 서울대학교는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라, 1991년 12월에는 서울대학교전임교수및조교임용규정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수 및 부교수는 교육공무원법 제47조 규정에 의해 정년까지 임용함.
- 정년 보장 전임 교수는 소속 기관의 예비 심사와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장이 임용 제청함.
- 정년까지 임용되는 전임 교수의 정수는 전체 전임 교수 정원의 100분의 90 이내로 함.
- 정년까지 임용할 전임 교수에 대하여는 그 임용 기간 중 다음 사항을 심사함.
  - 연구 실적 및 전문 영역의 학술 활동
  - 학생의 교수 및 생활 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 교육 관계 법령의 준수 기타 전임 교수로서의 품위 유지
- 조교수는 4년, 전임강사는 2년의 기간을 정하여 임용함.

교수 및 부교수는 정년까지 임용하도록 하고, 다만 부교수는 해당 단과대학장의 요청에 따라 6년 내지 10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해당 대학에 근무하지 않는 자로서 교수 또는 정년이 보장되는 부교수로 신규 채용되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3년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교수 이하의 교원의 경우 조교수 4년 이내, 전임강사 2년 이내, 조교 1년으로 임용권자(총·학장)가 임용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교수 직급에 따라 교수 정년 보장제와 교수 재임용제가 병행되었다.

또한 서울대학교는 정년 보장 전임 교수의 임용 심사를 위해 1991년 12월에 ‘서울대학교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규정’을 마련하여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고 부위원장 1인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총장이 임명하며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함.

- 위원회는 정년까지 임용한 전임 교수에 대하여 그 임용 기간 중 본교 전임 교수 및 조교 임용 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 4항에 대하여 소속 기관의 예비 심사 자료를 토대로 심사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함.
- 교수, 부교수 중 정년에 달할 때까지 임용되는 교원의 정수는 교육부 장관이 배정한 정원의 범위 안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함.

이에 따라 교수 및 부교수는 심사를 거쳐 정년을 보장하였다. 정년 보장 전임 교수의 심사 대상과 시기는 교수 또는 부교수로서 임용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로 하였고, 현직 조교수 또는 부교수로서 임용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부교수 또는 교수로 승진할 경우 그 승진 임용 예정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러한 교수 정년 보장제에 대한 평가는 1995년 11월에 개최된 ‘정년 보장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의견 발표회’를 통해 이루어졌고, 이를 바탕으로 「정년 보장 제도 실시 현황과 개선 방안 연구」라는 연구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이 보고서는 1992년부터 1994년까지의 총 6회에 걸친 심사에서 628명 전원이 정년 보장 지위를 부여받은 사실을 지적하며, 우수한 교수에게만 종신 재직권을 부여한다는 정년 보장제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① 정년 보장을 받지 못하면 재임용만 시키는 방안, ② 정년 보장 심사에서 탈락하면 퇴직시키는 방안을 제시하고, ②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②-1 정년을 보장할 교원을 새롭게 공개 채용하는 방안, ②-2 서울대학교 조교수의 승진 및 정년 보장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 ②-3 조교수의 부교수 승진 심사 시 외부 인사도 경합할 수 있게 하는 방안, ②-4 위 방안들의 절충안, ②-5 2명 이상의 조교수를 뽑아서 그중 한명만 정년 보장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보고서는 이 가운데 ②-1안과 ②-3안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였고, 특히 ②-1안을 추천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 보고서의 내용은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였다.

한편 교수 승진제를 보면, 교수들은 적절한 자격 기준을 갖추고 기준에 합당하면 승진할 수 있었다. 연구 실적 및 전문 영역에서의 학술 활동, 학생의 교수와 생활 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교육 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수로서의 품위 유지 등이 공통적인 심사 기준이었고, 일부 단과대학 및 학과는 내부 규정으로 서울대학교 규정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였다. 승진 임용에는 승진 소요 연수 이상을 재직하여야 한다는 기준이 있는데, 승진 소요 연수란 특정 직위에서 상위 직위로 승진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근무해야 하는 근속 연수를 의미하였다. 이러한 교수 승진 제도는 형식적으로는 연공주의와

업적주의 요소를 모두 가미한 것이었다.

그러나 승진제와 정년 보장제는 승진률과 정년 보장율이 거의 100%에 달하여 시행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아 최근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0년 이후 서울대학교전임교수및조교임용규정을 몇 차례 개정하여 정년 보장 기준을 강화하였다.

1. 교수는 교육공무원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까지 임용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2. 부교수는 계약제 임용을 원칙으로 하되 각 대학(원)에서 따로 정한 기준을 충족하고,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 심사에 통과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공무원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까지 임용할 수 있다.

즉, 대상 교원을 교수로 상향 조정하고, 부교수는 계약제 임용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 및 학술 분야 등 업적이 현저하게 우수한 경우에 한하여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예외적으로 정년 보장을 인정하도록 규정을 강화하였다.

또 부교수가 정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각 단과대학(원)에서 따로 정한 기준도 충족하도록 하였다. 공과대학의 경우는 SCI(과학기술논문색인) 등재 학술지 논문이 5편 이상이어야 하는 동시에 세계적인 국제 학회에서 논문상 또는 학술상 수상, 세계적인 국제 학술 회의에서의 초청 강연, 1억 원 이상 기술 이전 계약이 체결된 기술 개발 실적 등의 연구 업적이 있어야 했다. 자연과학대학의 경우는 국제 학술지 인용 지수 상위 20% 이내의 학술지에 실린 SCI급 논문을 5편 이상 제출해야 정년 보장 심사를 받을 수 있었다. 인문대학의 경우 단독 학술 저서, 단독 학술 번역, 단독 고전 번역 등 저서 출판이 있는 경우에만 정년 보장 심사 대상이 되며, 사회과학대학은 SCI 혹은 SSCI(사회과학논문색인)급 논문, 학술진흥재단 등재 학술지에 실린 논문만을 연구 실적으로 평가하기로 하는 등 강화된 심사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 규정이 처음 적용된 2003년 9월의 인사에서 부교수 승진이 결정된 22명 중 2명을 정년 보장 임용하였다.

### (3) 교수 업적 관리·평가제 시행과 성과급 연구비 지급

서울대학교는 1992년에 '학사운영쇄신방안'을 발표하면서 "교육 및 연구의 수월성

추구”를 추진 목표로 설정하고 교수 업적 관리 및 평가를 구체적 추진 사업으로 제시하였다. 이후 보다 구체적으로 교수 업적 관리·평가제 실시를 구상하고, 그 실시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1993년 8월에 「교수 업적 관리·평가 및 지원 체제 강화 방안에 대한 연구」라는 연구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이 연구 보고서는 서울대학교가 교수의 연구 업적을 본인이 기술한 대로 『연구업적집』에 수록·발간하기만 하여 선진국의 명문 대학과 포항공과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등에 비해 제도적으로 미흡하다는 점, 교육과 연구의 수월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교수 업적 관리·평가제가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교수 업적 관리 및 지원 제도의 강화 방안의 기본 원칙으로 첫째, 학문의 다양성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대학본부 차원의 획일적인 방안보다 각 단과대학(원)의 목표 및 역할에 맞는 실시 방안이 마련되도록 추진하고, 둘째, 규제 위주의 관리 방안을 지양하고 교수들의 자기 개발을 통하여 교육 및 연구 활동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지원 방안에 중점을 두며, 셋째, 교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강화하여 제도 시행에 따른 교수들의 업무 부담을 가능한 한 줄이도록 한다는 세 가지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하였다.

- 교수들의 업적을 학년도를 기준으로 매년 조사하여 교육, 연구 및 창작 활동, 교내외 봉사 활동,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기록 관리한다.
- 업적 관리 및 심사의 주체는 학문의 다양성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각 단과대학(원)으로 하고 이를 위해 각 단과대학(원)에 교수업적관리·평가위원회를 설치한다.
- 대학 전체의 일관성을 위해 대학본부에 교수업적관리위원회를 설치하며 업적 관리의 기본 원칙을 수립하고 각 대학별 업적 관리 시행 방안을 승인하도록 한다.
- 각 단과대학(원)의 교수업적관리·평가위원회에서는 ① 교수 업적 관리의 항목 및 양식을 결정하고, ② 업적 인정의 기준을 설정하며, ③ 각 교수들이 제출한 자료를 매년 심사하여 업적 인정 여부를 판정하고, ④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계열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서울대학교는 1994년 4월에 ‘서울대학교교수업적관리·평가에관한규정’을 제정하여 교수 업적 관리·평가제를 실시하였다. 교수 업적 관리·평가제는 교수의 업적을 공정하게 기록·관리하고 그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교육과 연구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 경쟁적 연구 풍토 조성 및 학술 활동 진작을 통해 국제 수

준의 연구 중심·대학원 중심 대학으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서울대학교교수업적관리·평가에관한규정’에서 규정한 주요 시행 방안은 다음과 같다.

- 교수업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사항.
  - ① 업적 관리·평가의 기본 원칙에 관한 사항.
  - ② 업적 우수 교수의 선정 및 예우에 관한 사항.
  - ③ 업적집 발간에 관한 사항.
- 대학(원)교수업적관리·평가위원회의 심의 사항
  - ① 업적 인정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 ② 업적 평가 기준 설정과 심사에 관한 사항.
  - ③ 업적 우수 교수 선정 및 추천에 관한 사항.
- 업적 평가
  - ① 평가 결과는 전임 교수의 승진, 재임용, 정년 보장의 심사, 성과급 연구 보조비 지급 및 연구 교수 선정 등 필요한 경우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
  - ② 업적 평가 결과는 비공개 원칙.
- 업적 우수 교수 선정: 우수 교수를 선정하여 총장, 학(원)장에게 추천. 5년 간의 업적을 대상.
- 연구 업적집 발간.

교수 업적 관리·평가제의 시행을 위하여 교수들은 자신의 강의, 연구 및 창작 활동, 봉사 활동, 기타 업적 등 네 항목으로 구성된 ‘교수 업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교수 업적 보고서에 기록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강의, 석·박사 배출 실적, 석·박사 지도 현황 등 교육 활동.
- 단행본, 논문, 기타 저작의 창작, 전시, 발표, 특히, 연구 과제 수탁 상황 등 연구 및 창작 활동.
- 교내 보직 및 위원회 활동, 학술 예술 및 체육 활동 등 봉사 활동.
- 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설문 조사.

교수들이 업적 보고서를 제출하면 각 단과대학(원), 연구소가 주관하여 교수 업적의 인정 여부 기준을 설정하고 확인 절차를 거쳐 업적집으로 발간하였다. 업적집은 서울대학교 교수들의 연구 성과 홍보와 교수 상호 간의 학술 정보 교환에 이용할 목적으로 발

간하였다.

1994년에 교수 업적 관리·평가제를 실시하면서 각 대학별로 교수 업적을 평가하는 기준과 활용 방안을 마련하였다. 각 대학마다 교육, 연구, 봉사, 기타 항목에 대한 평가 기준은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교육과 연구의 비중을 대등하게 설정하였다. 자연과학대학과 가정대학의 경우는 교육과 연구 분야를 구체적으로 점수화하여 평가하기도 하였다. 봉사 활동은 10~20% 정도의 비중을 두어 평가하였다. 또한 교수 연구 업적의 활용 방안을 보면 대체로 승진, 정년 보장, 성과급 연구 보조비 등에 활용하였고, 연구 교수를 선정하거나 해외 연구를 선정하는 데에도 활용하였다. 경영대학에서는 우수 교수 백서를 발간하기도 하였다.

한편 1995년도 이후 연구 보조비의 일부를 성과급 형태로 지급해야 한다는 교육부의 결정에 따라, 서울대학교도 각 단과대학(원)별로 본부 지침 범위 내에서 성과급 연구비를 차등지급하였다. 각 직급별로 정해진 연간 연구 보조비의 250%까지 차등 지급할 수 있었는데, 월별 지급액은 정교수의 경우 14만 원이었고,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순으로 1만 원씩 적게 지급하였다. 교수업적관리위원회는 교원 개개인의 교육, 연구 및 봉사 활동 등의 범위와 실적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결정하였다. 성과급 지급의 판단 기준이 될 업적 평가의 결정은 학과장 또는 단과대학(원)장의 책임 하에 각 단과대학(원)의 교수업적관리평가위원회에서 시행하였다.

초기에는 상당수의 학과와 단과대학에서 차등 지급의 원칙을 소극적으로 적용하였다. “교수 사회에 경쟁 체제를 도입해 연구력 향상을 꾀한다”는 취지로 연구비를 차등 지급하도록 하였는데도, 대부분의 대학은 직급별 급여 비율을 기준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나 2000년 이후에는 <표 2-3-13>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의 대학이 차등 지급을 하였고 그 차이도 커졌다. 대학 당국은 지급액 표준 편차가 큰 학과의 전체 지급액을 늘려줌으로써 성과급 차등지급을 유도하였다.

그런데 교수협의회가 1996년에 성과급 지급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찬성 44.2%, 반대 53.7%로 반대 의견이 많았다. 찬성 이유로는 “학문의 국제 경쟁력 제고”, “성과에 따른 연구비 차등 지급은 당연” 등이 나왔으며, 반대 이유로는 “성과급의 실제 봉급 성격”, “연구 업적 평가 기준 불분명” 등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연구비를 차등 지급하라는 교육부의 지침에 대해 일정 비율을 똑같이 지급하고 차등 지급 비율을 줄이는 절충안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았다. 업적 평가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탁월한 업적이 명백한 소수에게 상급 형태의 성과급 지급이 바람직하다는 대안도 제시되

(단위: 명, 천 원)

〈표 2-3-13〉 성과급 연구 보조비의 차등 지급 실적(1998~2001년)

구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지급결정액		표준 편차	지급결정액		표준 편차	지급결정액		표준 편차	지급결정액		표준 편차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문대학	154	278,067	99	232,094	206	243,496	160	243,496	104	220,039	130	
사회과학대학	100	184,701	440	175,057	136	163,929	99	163,929	375	171,788	619	
자연과학대학	182	328,404	178	276,612	181	271,876	180	271,876	176	265,795	181	
간호대학	18	33,618	129	26,644	102	26,189	18	26,189	92	26,038	60	
경영대학	30	52,956	55	42,108	131	43,743	30	43,743	73	45,036	61	
공과대학	234	437,053	265	383,205	282	391,447	250	391,447	306	404,878	268	
농업생명과학대학	103	186,101	131	148,513	93	138,671	97	138,671	268	156,965	436	
미술대학	30	52,489	59	43,349	162	44,329	30	44,329	69	40,741	49	
법과대학	33	59,025	89	47,938	268	52,712	34	52,712	63	45,987	48	
사범대학	104	183,637	80	146,339	152	133,780	90	133,780	66	130,337	59	
생활과학대학	24	41,123	104	34,833	81	32,759	23	32,759	141	35,496	150	
수의과대학	28	52,979	145	41,920	175	45,366	31	45,366	77	44,439	66	
약학대학	32	62,572	111	46,899	67	44,194	31	44,194	64	42,698	61	
음악대학	41	71,752	93	59,011	27	54,035	40	54,035	86	55,622	670	
의과대학	240	475,458	172	362,069	114	343,971	236	343,971	69	337,252	144	
치과대학	63	111,780	99	90,983	201	98,738	66	98,738	92	90,765	84	
보건대학원	21	37,110	218	27,957	180	29,933	20	29,933	187	25,385	214	
행정대학원	18	33,679	126	27,518	281	29,774	19	29,774	118	27,439	743	
환경대학원	16	36,294	278	25,985	391	27,134	16	27,134	681	31,526	38	
천연물(연)	11	18,974	44	15,353	106	15,866	11	15,866	41	15,212	38	
국제지역원	2	925	2	2,579	37	5,340	4	5,340	523	7,083	355	
사무국	1	1,950	1	1,504	1	1,401	1	1,401	1	313		
계	1,482	2,737,772	1,497	2,254,387	1,481	2,231,942	1,470	2,213,438				

출전: 「대학백서」 2000~2001



었다.

성과급의 차등 지급은 교수들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교수 역량을 최대화하려는 목적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제도의 취지를 잘 살리기 위해서는 교수 업적의 객관적인 평가 기준 확립 등 선행 조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4) 각종 비전임 교수 제도

##### ① 명예 교수제

1995년에 ‘서울대학교명예교수에관한세칙’을 개정하여 명예 교수 추천 절차의 완료 기일을 “피추천자가 퇴직한 학기 말 후 3개월 이내”에서 “매 학기 초 2개월 이내”로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퇴직 교수가 퇴직한 지 한 학기를 경과한 뒤에 명예 교수로 추천될 수 있던 이전에 비해 명예 교수로 추대될 수 있는 기간이 축소되었고, 예전에 의원면직된 교수들도 명예 교수로 추대될 수 있게 되었다. 1995년도와 1996년도에 정년 퇴직자 수보다 명예 교수로 추대된 전직 교수 수가 많았는데, 이는 위와 같은 사정에 기인한 것이다.

이후 2001년 4월 21일에 다시 세칙을 개정하여 명예 교수의 자격을 완화하였다. 이 자격 기준은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자격) ① 명예 교수로 추대될 수 있는 자는 퇴직 당시 총장 또는 교수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야 한다. 다만, 명예 교수로 추대될 수 있는 연령은 정년 퇴임에 해당하는 연령 이상으로 한다.

1. 본교에 전임강사 이상으로 25년 이상 재직한 자.
2. 본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20년 이상 재직하고, 그 재직 중 교육 및 학술상의 업적이 현저하거나 본교 발전에 공헌한 자.
3. 본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15년 이상 재직할 경력과 타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할 경력이 통산 25년 이상인 자로서, 그 재직 중 교육 및 학술상의 업적이 현저하거나 본교 발전에 공헌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직 기간 중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사회적, 윤리적 물의를 일으켜 학교나 교수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이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명예 교수 추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현재 서울대학교의 명예 교수 선정 방식은 형식적이며, 명예 교수에 대한 신분 관리

와 처우가 미비하다. 앞으로는 재직 기간에 관한 일정 요건만 충족되면 자동으로 명예 교수로 추대하는 관행을 탈피하고, 학문적 기여도, 사회적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추대할 필요가 있다. 또 서울대학교 명예 교수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

## ② 기금 교수제

서울대학교는 1994년 11월에 ‘서울대학교기금교수운영규정’을 제정하고, 1995년도부터 새로운 교수 임용 제도인 기금 교수제를 실시하였다. 기금 교수는 교수 총원의 일환으로 기업체 등 외부 기관이나 개인의 기탁금, 부담금 또는 이를 바탕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총장이 임명하였다. 서울대학교기금교수운영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응모 자격: 원칙적으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본교 교원 임용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 임용 기간: 3년 이내 계약제
- 연구 실적물의 인정 비율: 박사학위논문 200%, 그 외 단독 연구 논문이나 저서는 1편(권)당 100%, 2인 공동 연구 논문이나 저서는 1편(권)당 70%, 3인 공동 연구 논문이나 저서는 1편(권)당 50%, 4인 이상 공동 연구 논문이나 저서는 1편(권)당 30%
- 기금 교수는 본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 연구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 기금 교수의 처우는 교육공무원에 준하는 처우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금 교수의 임용 및 기타 사항의 세부 규정을 위해 ‘서울대학교기금교수운영에관한 시행세칙’을 두었다. 이에 따르면 기금 교수의 채용도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공개 모집의 심사는 신규 교수의 임용과 같이, 첫째, 전공 분야의 모집 분야에 대한 합당성 여부, 둘째, 연구 실적, 셋째, 개성과 품위, 넷째, 단과대학(원) 인사위원회의 의견 등을 기준으로 하였다. 신규 임용자는 대학인사위원회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도록 하였는데, 원칙적으로 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로 임용하였다. 1995년 이후 기금 교수 현황은 <표 2-3-14>와 같다.

기금 교수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다. 첫째, 기금 교수가 <표 2-3-14>에서 볼 수 있듯이 의과대학 등 특정 분야에 편중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기금 위탁자인 기업이나 재단의 사업과 직접 연관된 학문 분야에 기금 위탁이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문 분야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초 과학 분야에 대한 기금 교수 배정, 나아가 교양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배려도 필요할 것이다. 둘째, 계약

〈표 2-3-14〉 기금 교수 현황(1995~2005년)

(단위: 명)

구분 \ 연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경영대학	1	3	6	9	8	7	6	5	1	-	-
공과대학	-	2	2	3	4	6	6	2	2	4	3
사회과학대학	1	1	1	1	1	1	1	-	-	1	1
생활과학대학	-	-	-	-	-	-	-	-	1	1	1
약학대학	-	-	-	-	1	1	1	1	-	-	-
음악대학	-	-	1	1	1	-	1	1	-	-	-
의과대학	74	84	90	103	113	110	128	120	107	101	154
자연과학대학	-	-	-	-	-	-	-	2	2	-	-
치과대학	-	-	-	4	3	3	5	5	6	5	-
치의학대학원	-	-	-	-	-	-	-	-	-	-	2
기타	-	-	3	5	5	4	4	4	-	-	-
합계	76	90	103	126	136	132	152	140	119	112	161

출전: 『통계연보』, 각년판.

비고: 1. 각 년도 4월 1일 기준.

2. 기타는 천연물과학연구소, 의학연구원, 국제지역원.

기간이 만료된 후 기금 교수의 진로에 대한 정형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예측 가능한 진로 패턴이 정해지지 않는다면 우수 인력을 유입하기 어려울 것이다. 셋째, 기금 교수가 현실적으로 연구 활동에 전념하기보다는 통상적인 교육, 행정 업무에도 많은 시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중 부담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기금 교수제 운영이 각 단과대학마다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향후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 ③ BK 계약제 교수

‘두뇌한국21(BK21)’ 사업의 지원으로 BK 계약제 교수가 2000년부터 임용되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두뇌한국21 사업의 지원금으로 임용된 교수는 그 역할이나 처우가 기금 교수와 유사하나 BK 계약제 교수로 분류되어 교수 신분 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임용 상황은 〈표 2-3-15〉와 같다.

### ④ 초빙 교원

정부는 1981년 11월 23일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하여 초빙 교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서울대학교는 이를 근거로 1997년 4월 8일에 ‘서울대학교초빙교원에관한

〈표 2-3-15〉 BK 계약제 교수 임용 상황

(단위: 명)

사업단명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기계분야연구인력양성사업단	7	5	5	-	2	1
농생명공학사업단	7	2	3	2	1	-
인간생명과학연구단	12	7	5	9	6	3
화공분야연구인력양성사업단	1	1	2	3	1	1
사회기반및건설기술인력양성사업단	11	2	-	7	-	2
재료연구인력양성사업단	1	1	3	3	-	1
물리연구단	4	3	6	2	-	2
정보기술사업단	5	6	1	2	5	2
화학분자공학연구단	5	3	2	3	2	-
생명과학인력양성사업단	6	7	2	6	-	-
지구환경과학부사업단	2	2	3	2	1	-
수리과학사업단	2	2	2	2	1	2
아시아태평양교육발전연구단	1	2	-	-	-	-
21C 세계속의한국법발전연구단	1	1	1	3	-	1
공과대학	5	-	-	-	-	-

출전: 『대학백서』 각년판

규정'을 제정하였다. 초빙 교원은 “국가 기관, 연구 기관, 의료 기관, 공공 단체 또는 산업체 등에서 근무하거나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와 외국인으로서, 서울대학교와의 계약에 의해 기간제 신분 보장을 받는 교수”를 말한다. 초빙 교수는 한 학기 또는 학년 단위로 임용되며, 교수 및 연구에 필요한 시설 및 기자재를 제공받는다. 현재 초빙 교수는 과학 기술 분야와 외국어 분야에 편중되어 있다. 국내외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원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현재는 시간 강사 채용을 위한 예산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재정을 확보하는 실정이다. 초빙 인력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등의 복지 후생 제도도 미흡하기 때문에 우수 인력을 유치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점차 개선 중에 있으나 초빙 절차를 간소화하고 여러 학과에서 초빙 교원을 초청하려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 ⑤ 석좌 교수

서울대학교는 1997년 4월 8일에 우수한 경력을 가진 인사의 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석좌교수에관한규정’을 제정하였다. 석좌 교수는 탁월한 연구 업적, 또는

사회 활동을 통하여 국내 및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인사를 교내외에서 선임하여 교육과 연구 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임용하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노벨상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제 학술상을 수상한 자.
2. 인류 사회 발전을 위한 업적이 뛰어나 국제 기구 등에서 수여하는 상을 수상한 자.
3. 특정 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탁월한 학문적 업적을 이룩하고 인격과 덕망이 높은 자.
4.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육 및 연구 경력이 20년 이상이고 연구 업적이 뛰어난 자.
5. 기타 석좌 교수 자격이 있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자.

석좌 교수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은 학(원)장 또는 부속 기관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임용을 추천하였다. 그 후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대상자의 자격, 학문 업적 등을 검토하여 석좌 교수의 명칭과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도록 하였다. 석좌 교수 제도의 운영 경비는 외부 기관 및 개인의 기탁으로 조성한 석좌 교수 기금의 과실 또는 기탁금으로 충당한다.

서울대학교는 2004년 9월 1일에 황우석 교수를 첫 석좌 교수로 임용하였으나, 연구 논문의 허위 작성으로 석좌 교수직을 박탈하였다. 2006년 현재, 본부 차원의 석좌 교수는 없다.

#### ⑥ 계약제 전임 대우 교수제

2004년 2월 24일에 '서울대학교전임대우강사에관한규정'을 제정하여 2004년 1학기부터 시행하였다. 계약제 전임 대우 강사는 대학 국어, 대학 영어, 수학 등 교양 과목을 담당할 시간 강사 및 외국인 교수를 대상으로 하였다. 자격 기준은 박사학위 소지자로 하되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기 위한 외국인 등은 석사학위 소지자로 교육 및 연구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 하였다. 이들은 기초교육원에 소속하며 계약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평가에 의하여 2회까지 재계약 임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임 대우 강사는 매학기 3학점 4강좌에 상응하는 강의를 담당하고, 강좌 개발 및 학사 관련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2006년 4월 1일 현재 전임 대우 강사는 20명이다.

한편 2004년 10월 28일에는 '서울대학교전임대우연구교원에관한규정'을 제정하였다. 이 제도는 2004년도 학술진흥재단 중점 연구소 지원 사업의 신청 요건으로, 전임 대

우 연구 교원은 교내 지원 시설, 연구 시설, 부속 시설의 연구원, 전문 위원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격 기준은 박사학위 소지자로 하되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기 위한 외국인 등은 석사학위 소지자로 교육 및 연구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 하였다. 전임 대우 연구 교원의 소속은 해당 연구소로 하고 보수는 연구소 자체 재원에서 지급하였다. 계약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산 3년의 범위에서 재계약 임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임 대우 연구 교원은 2006년 4월 1일 현재 모두 18명으로, 자연과학 대학 2명, 공과대학 1명, 기초교육원 2명, 농업생물신소재연구소 4명, 수의과학연구소 3명, 의학연구원 3명, 입학관리본부, 여성연구소, 기초과학공동기기원에 각각 1명이다.

#### (5) 교수윤리위원회 발족과 교수 윤리 현장 공포

1998년 2월 19일에 교수윤리위원회가 발족하였다. 치과대학의 신규 임용 교수 공개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교수윤리위원회는 서울대학교 전임 교수의 윤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고, 심의 결과에 따른 시정 요구·보고·건의 및 기타 조치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기구이다. 교수윤리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교수 윤리 규범의 제정·개정 및 해석에 관한 사항.
2. 전임 교수의 윤리성 및 품위 제고 방안에 관한 사항.
3. 전임 교수의 교수 윤리 규범 또는 교수로서의 본분 위반 기타 품위 손상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심의에 부친 사항.

교수윤리위원회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였는데 위원 중 3인은 교수협의회에서, 3인은 평의회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하도록 하였다. 심의 결과에 따라 권고, 시정 요구, 경고 또는 중재를 할 수 있으며, 총장에게 후속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또한 피심의인 또는 심의 요청인은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2006년 3월 15일에 교수윤리위원회는 '서울대학교 교수 윤리 현장'을 제



그림 2-3-2 교수 윤리 현장을 발표하는 정운찬 총장

정·공포하였다. 교수 윤리 현장은 2005년도에 학내외에서 여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함에 따라 대학 사회의 자성과 새로운 각오가 필요함을 절감하여 그 제정이 추진되었다. 이에 2005년 6월 교수윤리위원회는 교수 윤리 현장 제정을 위한 검토 및 준비 작업에 착수하였고, 기초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학사운영위원회, 학장회, 평의원회에 보고하는 등 여러 절차를 거쳐 2006년 3월 15일에 교수 윤리 현장을 공포하였다.

교수 윤리 현장은 전문과 윤리 강령, 윤리 규범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전문에는 서울대학교가 세계 수준의 대학으로 우뚝 서고 국가 당면 과제와 제반 사회 문제의 해결에 한층 헌신해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과 요청에 충실하게 부응하고, 일반적 도덕과 연구 윤리, 국가 및 지역 사회와 대학 간의 관계 속에서 과생되는 대학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와 책임을 자기 성찰과 자기 개선의 정신을 바탕으로 재정립하기 위해 윤리 현장을 선포하게 되었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윤리 강령은 전반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수는 학생들이 전공 분야의 전문 지식뿐 아니라 인격과 교양을 아울러 갖추도록 교육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미래에 필요한 인재를 배출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2. 교수는 전문 연구자로서 학문의 수월성을 제고하고, 인류 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창의적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3. 교수는 전문 지식과 새로운 연구 결과를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공공의 이익과 복리 증진에 기여한다.
4. 교수는 학생을 대등한 인격체로 존중하며, 학생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5. 교수는 최상의 교육 및 연구 여건을 갖춘 교육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대학의 조직과 운영에 공정하게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윤리 규범은 윤리 강령을 바탕으로 1. 강의 및 교수 활동, 2. 연구 및 학술 활동, 3. 사회적 참여와 봉사, 4. 학생과의 인간관계, 5. 대학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라는 다섯 항목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제시하였다. 윤리 규범은 최근 서울대학교에서 발생한 각종 불미스러운 사건들을 염두에 두고 단지 선언적 문구가 아니라 교수의 교육, 연구, 사회 참여 등의 활동에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구체적 지침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상으로 교수 인사 제도와 임용 상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초기에는 교수 확충과 임

면의 법제화가 주요한 과제였으나, 이후 신규 임용 기준을 점차 강화하였고 기존 교수들에 대해서도 재임용제, 업적 관리·평가제 등을 시행하였다. 또 대학설치기준령에서 규정한 교수 정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었다. 최근에는 각종 비전임 교수 제도를 시행하여 교원 신분이 다양화하였다. 이와 같이 교수 인사제도는 사회의 다른 각 분야와 마찬가지로 그 기준이 강화되고 경쟁을 통해 차별화하는 추세에 있다. 구체적인 방안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고, 교수 수준의 향상은 곧 대학 교육과 연구의 질 향상과 직결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 제 2 절 총장 선출 제도의 변화

### 1) 이사회 의 총장 선임

개교 초기의 총장은 서울대학교 이사회에서 선임하였다. 1946년 8월 22일에 공포된 ‘국립서울대학교설립에관한법령’ 제7조는 이사회의 직능과 임무의 하나로 “유자격한 조선인을 국립서울대학교 총장으로 천거하여 서면으로 수락할 시 정식으로 그 직에 임명됨”이라고 규정하였다. 다만 군정 기간 중에는 군정 장관이 총장을 임명하도록 하였고 앤스테드가 초대 총장으로 임명되었다. 앤스테드 총장은 당시 중군 목사였던 미군 대위로, 1923~1924년에 로스엔젤리스 퍼시픽(Los Angeles Pacific)대학 사회과학 교수, 1925~1936년에 워싱턴 스프링스(Washington Springs)대학 경영관리과장, 1936~1944년에는 시애틀 퍼시픽(Seattle Pacific)대학 상업대학 학장을 지냈고, 1944년에 워싱턴 스프링스대학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인물이었다(Who was who in America vol III (1951-1960), p.29). ‘국립서울대학교설립안’이 나오기 전 미군정은 경성대학 총장으로 한국민주당의 김준연을 임명하려 하였지만 김준연이 이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국립서울대학교의 총장에 미군을 임명하였다. 그러나 당시 사회 분위기, 특히 국대안 자체가 격렬한 반대에 직면했던 상황에서 미국인이 국립서울대학교의 총장으로 임명되었다는 사실은 서울대학교의 출발에 큰 약점이 되었다.

규정된 절차에 따라 선임된 최초의 한국인 총장이 제2대 이춘호(1947년 10월 25일 ~1948년 5월 12일 재임) 총장이었다. 이춘호 총장이 학내 분규로 사임한 뒤에는 장리



욱이 제3대 총장에 선임되었다.

## 2) 정부 임명제 하의 교수회 동의권 여부

1948년 정부 수립 직후 이승만 정권과의 갈등으로 장리욱 총장이 사임하면서부터는 총장을 사실상 정부에서 임명하였다. 그런데 임명제 하에서도 교수회가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가의 여부는 대학 자율성 확보의 측면에서 중요하였다. 대학 자치권이 보장되었을 때 총장의 임명은 적어도 교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되어 총장 선출에 대학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었다. 대체로 제2공화국까지의 총장 임명 방식이 이와 같았다.

1953년 4월 18일 제정된 ‘교육공무원법’ 제8조의 총장 및 부총장의 임명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총장, 부총장, 학장(대학교의 학장 제외)은 교수회의 동의를 얻어 문교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2. 대학원장, 학장(대학교의 학장에 한한다), 교수, 부교수는 교수회의 동의를 얻어 행하는 총장 또는 학장(대학교의 학장은 제외)의 제청으로 문교부 장관을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3. 교수회는 대학을 단위로 하여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서 구성한다. 단 총장, 부총장의 추천에 있어서는 당해 대학교의 본항(本項)의 교원 전원으로써 교수회를 구성한다.

즉 총장은 문교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였으나 교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총장 임기는 6년, 부총장, 대학원장, 학장 임기는 4년으로 재임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부는 이와 같은 조항에 반대하였다. 교수에게 인사권(동의권)을 주는 것이 총장의 강력한 업무 수행을 어렵게 한다는 이유 때문이었는데, 최규남 총장이 반대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에 1954년 7월에 이선근 문교부 장관은 전국총학장회의에서 교직원 임명에 대한 교수회 동의 제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교수들의 반대 때문에 계획은 무산되고 위 규정이 그대로 시행되었다.

1953년 4월에 만들어진 서울대학교 학칙에는 교수회 심의 사항에 동의권이 반영되지 않았지만, 1954년 3월에 윤일선 부총장에 대한 임명 동의 투표를 실시한 이후 교수회의

동의 투표는 계속되었다. 이를 시작으로 교수들의 동의권은 교수들이 대학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장치로 기능하였다. 나아가 그것을 총장 신임 투표로 받아들이는다면 경우에 따라 ‘선출권’ 행사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1953년의 교육공무원법으로 보장되었던 교수회의 권한인 총·학장 임명 동의권과 교수 임용 동의권은 5·16 쿠데타 이후 1961년 9월 1일에 제정된 ‘교육에관한임시특례법’에 의해 박탈되었다. 관련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2-3-3 윤천주 제 13대 총장 취임식(1975년 6월 12일)

#### 제9조 (국, 공립대학의 장 및 교수 등의 임명 절차)

- ① 국, 공립의 대학교 또는 대학의 총장, 부총장 또는 학장(대학교의 학장을 제외한다)은 문교재건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문교부 장관의 제청으로 내각 수반이 임명한다.
- ② 국, 공립의 대학교 또는 대학의 대학원장, 학장(대학교의 학장에 한한다)은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총장 또는 학장(대학교의 학장을 제외한다)의 제청으로 문교부 장관이 보한다.
- ③ 국, 공립의 대학교 또는 대학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는 총장 또는 학장(대학교의 학장을 제외한다)의 제청으로 문교부 장관을 경유하여 내각 수반이 임명한다.

즉, 총장은 문교재건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문교부 장관의 제청으로 내각 수반이 임명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군정이 끝나고 제3공화국이 출범하면서 1963년 12월 5일에 교육에관한임시특례법을 폐지하고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하였다. 그렇지만 총장을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문교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여 기본적인 골격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러한 방식은 대학 사회 자체가 총장 선출에 참여하던 이전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었다. 총장에 대한 임명 제청권을 문교부 장관이 장악함으로써, 한국 최고의 학문적 권위를 상징하고 대학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서울대학교 총장의 지위는 독립성이 약화되었고 대학의 자율적 영역이 축소되었다. 더구나 기존에 총장이 행사하던 4급 이하의 대학 사무 직원에 대한 인사권도 문교부가 가짐으로써 대학 행정은 상부 기관인 문교 행정의 하위 행정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이에 따라 자연히 총장의 지위도 관리자의 직위로 격

하되었다.

이에 1980년 봄에 열린 교수협의회에서는 총장 선출권을 교수회에 부여하자고 결의하였다. 그러나 교수들의 이러한 결의는 아무런 법적 구속력을 지니지 못한 채 1980년 5·17 쿠데타 이후 무산되고 총장 임명제는 종전 그대로 유지되었다.

### 3) 총장 직선제의 실시

1987년 9월에 열린 교수협의회 임시 총회에서 총장 선출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듬해 3월 24일에 열린 교수협의회 이사회는 3월 10일 발표된 ‘국·공립대 총·학장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문교부의 시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다. 문교부가 제안한 시안은 추천위원회가 후보자의 자격 기준을 선정하여 후보자 등록을 공고한 후, 응모자 서류 심사·조사를 거쳐 적정 인원을 1차로 선발하여 비밀 투표로 5~6명을 선정하고 전체 교수회의에서 2~3명으로 압축, 추천위원회에 다시 통보하면 문교부는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 이상의 인사를 대통령에게 제청, 총·학장으로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문교부는 추천위원회의 위원을 16명 내외로 하되, 교수회 인사 8명(1/2 이상), 문교부 장관 추천 위원 1명, 동문회 추천 위원 2명, 시·도지사 추천의 지역 사회 인사 2명, 총·학장 지명 보직자 2명, 학부모 대표 1명 등으로 구성하도록 제안하였다. 그러나 교수협의회는 ‘서울대학교 자율화 지침’을 통해 총학장의 직선제 방안을 제안하였다.

총장 선출 제도와 관련한 논의가 분분한 가운데 1988년 4월 11일에 보건대학원이 서울대학교 사상 최초로 학장 선거를 실시하였고, 교수 투표를 통해 선출된 정문식 교수가 학장에 임명되었다. 이는 교수들이 보직 교수 임명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었다. 이때 두 가지 방안이 제시되었는데, 총장이 우선 지명한 후 교수회의의 동의를 받는 방안과 교수회의에서 복수 추천하여 총장이 지명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보건대학원에 이어 5월 29일에는 법과대학, 1989년 5월에는 가정대학과 경영대학에서 교수 직선으로 학장 후보 2명을 추천하고 이중에서 한 명을 총장이 임명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후 이러한 방식은 전 단과대학(원)으로 확대되었다. 임명된 총·학장에 대한 교수회의 동의 투표는 1950년대에도 있었지만, 학장이나 학장 후보를 투표로 결정하는 것은 처음이었으며, 이는 대학 자율화가 그만큼 진전되었음을 의미하였다. 다만

이 과정에서 독립적인 의결 기관인 각 단과대학 교수회의 소집권이 집행 기구인 학장에 속한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태 변화 속에서 1988년 8월 10일에 ‘서울대학교자율적발전방안연구위원회’가 열려 총장 선임 제도에 관한 학내의 공식적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 위원회에서는 10월 6일에 각 단과대학 교수회에 총장 선임 제도에 관한 논의를 요청하여 각 단과대학 별 총장 선임 방안을 모으기로 하였다. 수합된 각 단과대학의 방안들과 교수협의회의 방안 등을 토대로 하여 보다 합리적인 총장 선임 방안을 연구하고, 이를 통해 정리된 방안은 다시 공청회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수정 보완한 후, 교수회의 재심의를 거치고 기획위원회, 학장회 등의 공식 의결 기구의 논의를 마친 후 확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서울대학교자율적발전방안연구위원회는 수렴된 방안을 중심으로 두 차례의 모임을 거친 후 1989년 2월 28일에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여기에서는 “각 대학(원)별로 1~3인으로 구성된 총장후보제청위원회(가칭)에서 최종 후보 2인 이상을 선정 제청하는 방안(제1안), 총장후보선정위원회(가칭)에서 선정하는 2인 이상의 후보에 대해 교수 전원이 일괄 신임 투표로 제청하는 방안(제2안), 총장후보지명위원회(가칭)에서 선정 제시하는 후보자 5~10인을 대상으로 전 교수가 직접 투표로써 2인 이상의 후보자를 선출 제청하는 방안(제3안)” 등 세 가지 방안이 제시되었다. 서울대학교자율적발전방안연구위원회는 두 차례의 설문 조사를 통해 제3안을 총장 선출 방안으로 확정하였다.

이후 1989년 8월 24일에 열린 학장회에서 사실상 직선제에 의한 총장 선출 방안을 확정하였다. 확정된 방안은 각 단과대학(원)의 교수 대표(부교수 이상) 50인 이내로 구성된 총장후보선정위원회가 5인 이내의 총장 후보를 지명하고, 서울대학교에 재직 중인 전임강사 이상 전체 교수가 2인 연기명식 직접 비밀 투표를 하여 최종 2명의 후보를 선출한 후, 이를 문교부 장관에게 추천하면 최종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었다. 총장후보선정위원회는 총장 임기 만료 2개월 전에 각 단과대학(원)의 교수회가 교수수를 고려하여 선임한 1~5명씩의 위원들로 구성되었다. 이 위원회가 총장 자격 기준 설정, 총장 후보 대상자 심사, 5인 이내의 후보 지명, 전체 전임 교수의 투표 관리 등을 관장한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총·학장 직선제로 학내에 파벌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학생과 직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하였지만, 직선제를 통한 대학 자율화의 일보 진전이라는 의미에서 학내외의 지지를 받았다.

1991년 7월에 서울대학교 최초로 총장 직선제가 실시되었다. 7월 9일에 총장후보선



그림 2-3-4 김중운 제 19대 총장 취임식



그림 2-3-5 제20대 총장 선거 투표장(1995년)



그림 2-3-6 제20대 총장 선거 개표 모습(1995년)

정위원회는 대학 교육 경력 10년 이상으로 행정 능력과 덕망이 있으며 대학 자율화를 추진할 능력을 겸비해야 한다는 후보 자격 기준에 따라 예비 후보 9명을 선정하였다. 투표 방법은 ① 1차 투표 시 기표 방법은 2인 연기명으로 하고, 1인 단기명 또는 1인 이중 기명은 무효로 하며, ②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은 후보가 1인일 때에는 2차 투표에서 그를 제외하고 차상위 득표자 2인 중에서 다시 1인 단기명으로 투표하며, ③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상위 득표자 3인 중에서 다시 2인 연기명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며, ④ 이렇게 하여 선정된 상위 2인을 교육부에 추천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김중운 교수와 김영국 교수가 최종 후보로 선출되었고, 그중 최다 득표자인 김중운 교수가 8월 13일에 제19대 총장으로 임명되었다.

1991년, 최초의 총장 선거가 실시된 이후 총장후보선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건의서를 제출하였다.

1. 총장 후보 선출 기간을 3개월로 연장함.
2.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상위 득표자 3명 중에서 2명을 선출하는 경우 단기명 종다수로 선출함.
3. 후보 대상자는 학내외 인사를 막론하고 본교 전임 교수 ○○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등록하도록 함.

4. 후보 선정 위원에서 학(원)·처·실장급 보직자는 제외함.
5. 2차 투표를 실시할 경우에는 다음날 실시함.
6. 단기명 종다수로 후보 2명을 선출하는 방안을 검토함.
7. 5명의 후보 지명 후 본인의 동의 여부 확인 절차와 후보 사퇴 시기를 부여함.

이러한 건의에 따라 총장 직선제를 보완하기 위해 ‘총장선출제도연구위원회’가 1993년 1월에 조직되었다. 위원장은 부총장이었고 기획실장을 포함하여 각 대학(원)에서 추천한 교수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였다. 위원회에서는 같은 해 5월에 시행한 교수 의견 조사 결과와 1991년 7월에 총장후보선정위원회가 건의한 내용 등을 1993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검토하였으나 특별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다.

이후 총장 직선제를 통해 1995년 3월에 이수성 총장이, 1996년 2월에 선우중호 총장이, 1998년 11월에 이기준 총장이, 2002년 7월에는 정운찬 총장이 각각 선출, 임명되었다.

#### 4) 간선제 전환 논의와 학내 구성원 참여 확대

1991년부터 총장 직선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었다. 먼저 2001년 12월 17일에 블루리본패널이 제출한 보고서인 『세계적 연구 중심 대학의 창조: 서울대학교 사례 연구(Elevat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to a World-Class Research University)』에서는 현행 직선제는 첫째, 대학 내외부에서 후보자를 모색하는 작업이 충분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많은 우수한 후보자들이 물망에 오르지 못하게 되고, 둘째, 교수들이 선출한 총장은 내부 정치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 총장의 권한, 독립성 및 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사회에서 총장을 임명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2003년 4월의 서울대학교운영체제개선연구팀에서 제출한 『서울대학교 운영체제 개선 연구 결과보고서』에서는 총장 선임 방식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첫째, 선거 관리와 후보 선정의 권한을 담당하고 있는 총장후보선정위원회가 선거 직전에 구성되므로 총장 후보의 자격 조건과 자질을 심사, 검정하는 절차가 극히 형식적이고, 또 위원 중 일부는 중립적 입장에 서지 못하고 특정 후보자의 지지자 또는 반대자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둘째, 총장 후보자의 모집이 개방적이지 못하며 학내외의 유능한 인사를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기능이 미약한 것, 셋째, 2인 연기명의 현행 투표 방식으로는 교수들의 선호가 정확히 투표 결과에 반영되기 어려운 점, 교수들 다수가 지지하는 후보가 반드시 상위 득표자가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선거 과정에서 경쟁 후보자의 견제 수단으로 악용될 개연성도 높은 것 등이었다.

서울대학교운영체제개선연구팀에서는 그 대안으로 다음의 네 가지 안을 제시하였다.

제1안: 평의회가 구성한 총장후보선정위원회에서 총장 후보자 2~5인을 지명하고 전임 교수의 '1인 단기명 직접 투표'를 거쳐 총장 후보자 2인을 선정하는 방안.

제2안: 평의회가 구성한 총장후보선정위원회에서 총장 후보자 3~5인을 지명하고 전임 교수가 지명자 전원에 대하여 각각 찬반 투표를 하는 '승인 투표'를 거쳐 총장 후보자 2인을 선정하는 방안.

제3안: 평의회가 구성한 총장후보선정위원회에서 총장 후보자 2인을 지명하고 전임 교수가 지명자 전원에 대하여 각각 찬반 투표를 하는 '승인 투표'를 거쳐 총장 후보자 2인을 선정하는 방안.

제4안: 평의회가 구성한 총장후보선정위원회에서 총장 후보자 2인을 선정하는 방안.

이 네 가지 안을 가지고 2002년 12월과 2003년 1월에 두 차례에 걸쳐 전임 교수 이상의 교수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교수들의 89%가 현행 총장 선임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바람직한 총장 선임 방식으로는 제1안이 1차 48.1%, 2차 70.6%의 지지를 얻었다. 이를 토대로 서울대학교운영체제개선연구팀은 다음과 같이 권의하였다.

첫째, 다수 교수의 의견 수렴이라는 차원에서 총장 선임 개선 방안을 찾는다면 다수 교수들의 지지를 얻은 제1안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제1안과 같이 '단기명 직접 투표'에 의하여 총장 후보자를 선임하더라도 간선제적 요소가 현행보다 더 강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다. 즉 총장후보선정위원회가 명실상부한 총장 후보 Search Committee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2~5인의 총장 후보자 지명 시 교내외에서 최고의 적임자를 찾을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이 총장후보선정위원회에 주어져야 하며, 총장후보선정위원회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후보자에 대한 검증 작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다수 교수들이 지지한 제1안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대구

모 전임 교수를 보유한 대학이 소수 대학의 연합에 의하여 총장 후보가 독점될 가능성, 총장 선거가 현행보다 더 과열될 가능성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셋째, 중장기적으로는 현행 직선제에 의한 총장 선임 방식을 간선제(제4안)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직선제는 대학 운영의 자율성과 민주성 제고라는 장점이 있으나, 이로 인한 폐해도 상당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다. 총장 선거의 과열로 인하여 교육적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고, 직선제에 의한 총장 선출 과정에서 무리하게 제시된 선심성 공약으로 인하여 총장 취임 후 강력한 개혁적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점이 집중적으로 거론되었다.

즉, 서울대학교운영체제개선연구팀은 다수 교수들이 지지한 ‘2인 연기명 직접 투표’를 ‘1인 단기명 직접 투표’로 바꾸는 제1안을 바람직한 방안으로 제시하였으나, 이 제1안도 여러 문제점이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는 간선제를 채택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2003년 8월 23일에 학칙을 개정하여 총장 후보 대상자에 대한 기표 방법을 ‘1인 단기명’으로 변경하였다.

이런 가운데 2005년 4월 12일에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현행 총장 직선제로는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 개혁을 하기 어려우므로 국·공립대 총장 직선제를 폐지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02년에도 총장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의 출신 고교나 단과대학, 지역에 따른 교수 사회의 분열, 상호 비방, 금품 거래설 등 각종 편법과 비리 발생 등의 직선제 폐단을 지적하며 간선제 실시를 주장하였으나 교수들의 반발로 무산된 적이 있었다.

2005년 5월 4일에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에서 총장 선출 관련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다.

#### 제24조 (대학의 장의 임용)

- ① 대학(공립대학을 제외한다. 이하 제27조까지 같다)의 장은 당해 대학의 추천을 받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새로이 설립되는 대학의 장을 임용하거나 대학의 장의 명칭 변경으로 인하여 학장으로 재직 중인 자를 당해 대학의 총장으로, 총장으로 재직 중인 자를 당해 대학의 학장으로 그 임기 중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 ②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대학의 장을 임용 제청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 ③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대학의 장의 임용 추천을 위하여 대학에 대학의장임용추천위



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④ 위원회는 해당 대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대학의 장 후보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위원회에서의 선정
    2.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
- 제24조의3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선거 사무의 위탁)
- ① 대학의 장 후보자를 추천함에 있어서 제24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직접 선거에 의하는 경우 해당 대학은 선거 관리에 관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 선거를 수탁 관리함에 있어서 후보자 등록, 선거 기간, 선거 운동, 선거 비용, 투표, 개표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각 대학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 선거를 수탁·관리하는 경우 이 법의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 및 조사, 중지, 경고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72조의2 및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④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선거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대학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의 내용을 정리하면, 국립대학교의 총장 선출 방식은 간선제를 원칙으로 하고, 대학 교원의 과반이 찬성하면 총장 직선제를 실시하되, 총장 직선제를 실시하는 대학은 각 시·군·구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총장 선거를 관리한다는 내용이였다. 이에 따라 서울대학교가 직선제를 유지할 경우 2006년 5월의 총장 선거를 관악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게 되었다. 또 선거 운동을 제한하여 선전 벽보 부착, 선거 공보 배부, 소형 인쇄물 배부,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 개최, 전화·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이외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대학교는 거세게 반발하였다. 정운찬 총장은 “정부 기구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총장을 직선제로 뽑는 국립대의 선거 과정을 관리하는 것은 전제 정치 하에서나 가능한 일”(『대학신문』 2005년 5월 15일자)이라며 강하게 반발하였고, 평의원회와 교수협의회도 성명을 발표하여 정부의 방침을 비판하였다.

평의원회는 2005년 5월 16일에 ‘대학의 자율권 제고를 위한 서울대학교 평의원회의 결의’를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평의원회는 “대학 총장 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를 관할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법안은 대학의 자율적 의지를 현저히 침해하고, 대학의 자치 능력을 경시하는 부당한 조치이다. 이는 대학에 대한 외부의 간섭과 규제를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대학의 자율성을 저해함은 물론 교육과 연구의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원인이 되어 결국 대학의 위기를 심화시킬 것이다”라고 비판하며 이의 시행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교수협의회도 5월 16일에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한 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 의견서’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는데, “직선제에 폐단이 있다고 해서 대학의 자율적 행위인 총장 선거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개입하게 한다는 발상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개정안은 대학이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지 않고 대학 사회의 자정 노력 자체를 원천 봉쇄한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한편 총장 선출에 교수만이 참여하였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대학의 주요 이해 당사자인 학생과 직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도 계속되었다. 이와 같은 요구를 반영하여 2005년 8월 25일에 평의원회는 첫째, 학생과 직원이 총장 후보 선출 위원 중 외부 인사 각각 1명을 추천하고, 둘째, 총장 후보 선출 위원의 20%를 여성으로 구성할 것을 결정하였다.

나아가 직원들은 서울대학교공무원직장협의회와 전국대학노동조합 서울대지부를 중심으로 직원에게도 총장 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라고 요구하였다. “대학의 총장이란 단지 ‘교수회 의장’과는 구분되는, 대학 행정의 최고 책임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대학 행정을 전담하는 근로자들에게 총장 선거권을 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직원들의 총장 선출 참정권 요구는 대학의 민주화와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당한 요구이며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학내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평의원회는 총장 직선제의 유지 여부, 학내 구성원의 참여 확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2006년 3월 8일부터 7일간 교수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총 980명의 교수가 참여하였다. 이중 “현행 직선제를 유지해야 한다”에 응답한 교수가 229명(30.5%), “현행 직선제를 유지하면서 학내 구성원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가 119명(12.1%)이었고, “총장 선거 간선제 전환”에 찬성한 교수가 558명(56.9%)으로 나타났다.

3월 22일에 평의원회는 현행 직선제의 유지와 학내 구성원의 참여 확대를 의결하였



그림 2-3-7 제24대 총장 선거(2006년 5월 10일)

다. 설문조사 결과 총장 선거의 간선제 전환을 지지하는 교수들이 많았지만, 평의회는 직선제 폐지에 대해 일부 교수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총장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총장 선거를 간선제로 전환하는 논의는 다음 선거로 미루기로 하였다. 그러나 다음 총장 선거부터는 간선제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총장 선거에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4월 7일에 ‘총장후보추천에관한규정’을 개정하여 투표권을 행사하는 범위를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과 평의회가 정한 자”로 변경하였다. 평의회는 총장 선거에 참여하는 확대 구성원을 직원(일반직, 연구직, 별정직, 기능직, 기성회직, 청원 경찰)으로 의결하였고, 또한 직원 참여 비율을 “직원 투표율 대비 10%”로 확정하였다. 따라서 직원들이 모두 투표에 참여할 경우 약 98표가 총장 선거에 반영되게 되었다.

새로운 총장 선출 제도는 2006년 제24대 총장 후보자 선거부터 적용되었다. 4월 25일, 총장후보선정위원회는 성낙인, 안경환, 오연천, 이장무, 조동성 교수 등 5명을 총장 후보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5월 10일에 1차 투표가 실시되었으나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5월 11일에 상위 득표자 3명을 대상으로 한 2차 투표가 실시되었다. 그 결과 이장무 교수가 35.8%, 조동성 교수가 33.4%를 얻어 총장 후보로 선출되었다. 이 중 제1순위자인 이장무 교수가 제24대 총장으로 임명되어 7월 20일부터 그 임기를 시작하였다.

총장 선출 제도는 정부로부터의 대학 자율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논의되어 왔다. 총장 선출에 대학 구성원의 의사가 잘 반영될 수 있는 방향, 또 선출 과정에 참여하는 대학 구성원의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자율성보다는 효율성과 경영 능력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국립대학교 법인화 문제와 맞물려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대학교는 한국 고등 교육을 선도하는 대학으로서 총장의 역할을 다시 새롭게 확립하고 이에 맞는 총장 선출 제도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 제3절 교수 사회와 교수 단체의 활동

### 1) 교수회의 활동과 대학 자치

#### (1) 초기의 교수회

개교 초기 국립서울대학교에 참여한 교수들 사이에서는 교수회의 권한을 강화하고자 하는 논의가 계속되었다. 1947년 3월 미군정이 밝힌 바에 의하면, 교수회는 학부 교수회와 대학 교수회가 있었고 각각 그 의장인 학부장과 대학장의 자문 기구에 불과하였다. 1947년 3월 ‘대학운영에관한입법결의안’에서는 대학 운영과 학문 연구에 학장과 교수의 건설적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지만, 실제 대학 운영은 문교부의 지도 하에 이사회와 학장회가 전담하였고, 교수회는 소외되어 있었다. 미군정이 교수회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이사회가 대학 운영을 담당하도록 한 것은 좌익 계열 교수들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목적도 있었다.

이 시기 교수회 권한을 강화하자는 논의는 상당수의 교수들이 일본식 대학 풍토에 익숙했던 사정과도 관련이 있었다. 서울대학교의 교수회는 일제 식민지기 대학의 그것과 큰 차이가 있었다. 일제 식민지기의 교수회는 인사 문제에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대학의 운영 전반에 걸쳐 강력한 권한을 가졌다. 따라서 이러한 체제 하에서 공부하고 강의하였던 교수들은 민주주의 교육을 표방하면서도 교수회의 권한을 축소하고 이사회를 대학 운영의 중심에 둔 데 대해 큰 불만을 가졌다.

일부 단과대학의 교수회가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현실에서 당시 법적으로 절대적인 권한을 가졌던 이사회와 충돌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1948년 4월에 일어난 연구실 배정 문제를 둘러싼 분쟁이었다. 1948년 4월에 이사회에서는 문리과대학에 연구실 일부를 법과대학에 양도하도록 명령하였다. 경성대학 법문학부 중 문과는 문리과대학의 일부로, 법과는 법과대학의 일부로 편입되었으므로 과거 법문학부에서 사용하던 연구실은 문리과대학과 법과대학이 분배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문리과대학에게 연구실 일부를 양도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문리과대학 교수들은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이사회가 개입하여 명령을 내렸던 것이다. 문리과대학 교수회에서는 이러한 이사회의 개입을 거부하고 오히려 이사진 총사퇴와 총장 인책을 결의하였다. 이사회에서도 강경하게 맞서 문리과대학장의 사퇴를 결의하여 통고하였다. 이에 문리

과대학 교수 일부는 사직원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결국 이러한 진통 속에서 1948년 4월 16일에 이춘호 총장이 사임하였고, 제3대 장리욱 총장이 들어서서야 겨우 사태를 수습할 수 있었다.

이 사건은 교수회 건설을 통해 대학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대학 자치의 일부나마 확보하고자 했던 당시 교수들의 움직임이었다. 또 서울대학교가 연립대학교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였다는 점과, 이사회 중심 대학 운영 체제의 문제점을 드러내었다. 교수회의 반발로 말미암은 이 사건으로 결국 이사회는 대학 운영에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고, 점차 학장회가 대학 운영의 중심 역할을 맡게 되었다. 단과대학의 독자적인 성격이 강했던 당시 상황에서 교수회 또는 교수회 의장인 학장들의 학장회가 이사회의 기능을 약화시키면서 대학 운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교수회는 각 단과대학 단위로 운영되었다. 교수회는 기본적으로 단과대학의 교과 과정, 입학과 졸업, 학생 지도 등 학사 문제에 대하여 학장의 자문 역할을 하였는데, 실제 그 역할은 대학에 따라 차이가 많았다. 교수회규를 제정하여 시행하는 단과대학도 있었고, 사범대학의 경우에는 학장이 의장인 평의원회를 구성함으로써 학장의 자문 기관 역할을 넘어 실질적인 의결 기관으로 기능하기도 하였다. 문리과대학이나 의과대학은 교수회의 권한이 강력하였는데, 문리과대학 교수회에서 이사회에 반발할 수 있었던 것도 거기서 연유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초창기의 교수회는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었으므로 단과대학에 따라 기능의 차이가 있었지만 강력한 권한을 가진 단과대학도 있었다.

## (2) 교수회의 법제화와 그 기능

1953년 4월 18일에 제정된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교수회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고, 서울대학교학칙에도 교수회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었다.

교육공무원법의 교수회 관련 조항을 살펴보면, 먼저 각 단과대학에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수회를 두도록 하였다. 교수회는 대학을 단위로 하여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서 구성하고 의장은 학장이 맡도록 하였다. 또 교수회가 총장·부총장·학장·대학원장·교수 등의 임명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즉 총장·부총장은 교수회의 동의를 얻어 문교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였고, 대학원장·학장·교수·부교수는 교수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이 제청하면 문교부 장관을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였다. 이외에 해당 학장의 소관 업무 가운데 학칙과 제 규정의 제정과 변경 발의, 입학·수료 및 졸업, 학생 지도·장학 및 후생,

학생 포상 및 징계, 교과 과정, 각 대학(원) 인사위원회 위원 선출, 학부 또는 학과 간의 업무 조정, 학부 또는 학과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건의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학칙에는 교수회를 심의 기관으로만 규정하여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총장·부총장의 임명 동의권도 인정하지 않았다. 학칙에서 규정한 교수회의 심의 사항은 교육공무원법 8조 2항의 학장 및 부교수 이상 교수에 대한 임명 동의권 이외에, ① 제 규정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입학, 수료 및 졸업에 관한 사항, ③ 고사 및 시험에 관한 사항, ④ 학생의 상벌에 관한 사항, ⑤ 장학금 급여에 관한 사항, ⑥ 기타 교육상 필요한 사항 등이었다. 위와 같은 사항 중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인사권이 있었다.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총장과 부총장에 대한 임명 동의권은 학칙에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는 총장, 부총장 임명 시 교수회가 동의 투표를 실시하였다. 학장을 임명할 때에도 총장이 제청하여 해당 대학 교수회의 동의를 구하였고, 조교수 이상 교수의 임용과 승진에 대해서도 비밀 투표를 실시하였다.

1954년 3월에는 부총장 임명을 위하여 서울대학교 전체 교수가 동의 투표를 실시하였다. 당시 투표 자격이 있는 조교수 이상은 223명이었고 그중 158명이 참가하였다. 투표 결과, 총장이 제청한 윤일선 교수가 다수의 동의를 얻어 부총장에 취임하였다. 1956년 6월에는 최규남 총장이 문교부 장관으로 취임함에 따라 총장 임명을 위해 동의 투표를 실시하였다. 문교부 장관이 후보를 지명하여 교수회의 동의를 구하였는데, 후보로는 윤일선 부총장이 지명되었다. 조교수 이상 교수 270명 중 200명이 참가한 투표에서 181표의 동의를 얻어 윤일선 부총장이 제6대 총장으로 취임하였다. 교수회의 동의에 의해 총장이 취임하게 된 것은 대학 자치의 성장에 매우 획기적인 일이었다. 한편에서는 총장 임명 시 교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총장의 권한이 제약된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정부에 의하여 임명되는 총장이 교수회의 투표에 의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은 대학 자치의 성장을 의미하였다. 의과대학의 경우에는 전임강사 이하 무급 조교를 임용할 때에도 교수회의 동의를 구하곤 하였다. 인사 문제는 대체로 원안대로 통과되지만 간혹 부결되는 경우도 있었다. 문리과대학에서는 1956년 12월에 학장 임명 동의안이 부결되어 총장이 학장 후보를 다른 교수로 교체하였지만 역시 부결되었던 일이 있었다.

문리과대학, 의과대학, 사범대학처럼 규모가 큰 대학은 교수회의 정원이 너무 많아 교수회가 제 기능을 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대학 평의원회의 구

성을 모색하였다. 문리과대학 교수회에서는 1956년 5월에 평의원회 규약을 통과시켰고, 의과대학에서는 1956년 8월 평의원회가 구성되었다. 의과대학에서는 이에 앞서 1953년 11월에 학장 자문기관으로 정교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 적도 있었다. 사범대학에서도 1954년 평의원회를 결성하고 평의원을 선출하였다. 평의원회는 교수회에서 선임된 소수의 영향력 있는 교수들로 구성되어 학사, 인사, 예산 등과 교수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였다. 1957년 1월에 총장이 각 단과대학의 평의원회를 폐지하도록 지시하였는데, 이는 평의원회와 학교 당국 사이에 마찰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 한편으로 원로 교수들이 모인 평의원회와 소장 교수들 사이에도 마찰이 있었다. 이러한 점은 평의원회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 (3) '교수협회' 제안

일부 교수들은 대학 자치의 신장을 위하여 새로운 조직의 창설을 제안하였다. 1956년 4월에 신태환 교수는 학원과 교수의 권익을 지키기 위하여 교수들이 공동 전선을 펼 필요가 있다고 하며 교수협회를 결성하자고 제안하였다. “대학교수는 생활을 위한 직업으로서 가치는 다른 직업과 다를 것이 없다”는 서두로 시작되는 이 제안서에서는 우선 교수라는 직업이 대학이라는 기관에 고용된 기술자직에 불과하며 따라서 초세적(超世的)인 생활 태도가 교수직의 본질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오늘날 신성한 직업으로서 대학교수를 부르는 사람들의 심정에는 그들을 존경하느니보다는 오히려 경멸하고 대학교수를 사회적 변경으로 몰아 버리려는 아이러니가 내포되어 있는 것 같다. 이와 같은 풍조에 밀려 교수 자신들은 청빈 사상이라는 무기력이 도덕화된 낭만적 정신에 사로잡혀 정신병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것 같다. …… 불평과 음모가 횡행하고 그리하여 대학의 권위를 저하시키고 한국의 지성을 유린하는 것을 묵과할 것인가? 그리하여 모든 불합리한 것을 청산하는 길은 교수들 자신이 대학교수라는 구래의 자존심을 버리고 모든 직업인들과 같이 직업적 의식을 견지하고 전체 교수가 조직되는 것이라고 본다. …… 그 방법으로 우리는 교수노동조합과 같은 내용을 갖는 교수협회를 만들 것을 제창한다(『대학신문』 1956년 4월 9일자).

이것은 초보적인 형태나마 ‘교수협회’를 조직하여 교수들 자신의 문제와 자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1956년의 3대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1인 1당 독재가

보다 강화되어 가는 시기에 이러한 견해가 나왔다는 것은 매우 주목된다.

195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자유당 정권의 독재는 더욱 심화되었고 부정부패가 만연하였다. 현실에 대한 비판도 탄압을 받았다. 특히 대학의 비판을 꺼려 학원 사찰을 강화하였고, 교수들에게 집권당을 지지하도록 압력을 가하였다. 또한 교직원 인사에 대한 정부의 간섭도 심해졌다. ‘교육공무원법’에 교직원 승진은 해당 대학 교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그 절차를 거쳐 총장이 상신하면 그대로 발령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이때는 교수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이 행한 인사 행정이 정부에 의해 부당하게 처리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교수들이 정부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직체는 존재하지 않았다. 1957년 5월에 한국교수협의회가 교수의 친목 도모와 신분 보장 및 학술 연구를 목적으로 결성되어 서울대학교 교수도 일부 참여하였지만 이는 어용적 조직에 지나지 않았다. 교수의 생활 보장과 대학의 권위를 지키기 위한 이러한 교수협회 결성론의 대두는 대학의 자치를 성장시키기 위한 교수들의 주체적인 노력의 태동이었고, 이후 교수협의회 건설의 모태가 되었다.

## 2) 교수협의회 결성과 대학 자율화의 시련

### (1) 교수협의회 결성과 활동

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는 창설 이후 서울대학교가 맞이한 시대적 격변의 흐름에 동참하며 고난의 역정을 걸어왔다. 교수협의회는 학칙에 규정된 기구가 아니었다. 그러나 교수협의회는 교수들의 자치 단체로서 특정 시기, 즉 4·19 혁명 이후나 10·26 사태 이후에는 대학 관리 기구 못잖은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하였다.

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가 처음 만들어진 것은 1960년 6월 18일이었다. 처음에는 ‘교수친목회’라는 명칭으로 일부 교수들이 중심이 되어 교수들의 친목과 권익 옹호 및 서울대학교 발전에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협의, 건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치 단체로 결성되었다. 그해 7월 10일에는 국립대학교 운영책에 대한 시정 사항을 4개 조항을 결의하여 ‘대학설치기준령’에 의거하여 시설 일체의 국고 부담, 교수 연구비 지급 등을 요구하였다.

이후 서울대학교의 모든 교수들에게 문호가 개방되었고 임원도 각 단과대학 교수회



에서 정식으로 선출하는 한편 명칭도 ‘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로 개칭하고 1960년 9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교수협의회는 전임강사 이상의 서울대학교 교원을 회원으로 하여, 각 단과대학 교수회에서 2인씩 선출된 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초대 회장에는 의과대학 나세진 교수, 부회장에는 사범대학 이하운 교수, 문리과대학 이승녕 교수가 선임되었다. 초창기의 활동은 결성 목적에서 보듯이 교수 권익 보장을 위한 활동이 주된 것이었다. 1960년에 교수 처우 개선에 대한 요구를 둘러싸고 총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를 내세워 요구를 관철시킨 것은 교수들의 집단적인 힘을 확인시킨 것이었다.

그러나 5·16 쿠데타 이후 교수협의회회의 활동은 교수 권익 옹호라는 차원에 머물러 뚜렷한 활동을 하지 못하였다. 이 시기 눈에 띄는 활동은 1964년 5월 27일에 한일협정 비준 반대를 둘러싼 시국 수습 결의안을 채택한 것이다. 이 결의안에서는 근본적인 개혁 정책, 군의 정치적 중립, 학원 사찰의 금지와 학원 자율화의 보장, 구속 학생 석방, 교육법 개정과 총·학장 임명제 시정, 교수 급여의 현실화 등 6개 항을 결의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1965년 8월 한일협정 비준 반대 운동의 확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신태환 총장을 면직시켰고, 이어 9월에는 ‘정치 교수’라는 명목으로 법과대학 황산덕, 김기덕 교수를 파면시켰고, 양호민 교수는 사퇴의 형식으로 강단에서 물러나게 하였다. 이는 이후 대학이 ‘탈정치화’ 하는 계기가 되었다.

1971년에는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대학 자율화를 위해 매우 적극적이고 집단적으로 의사를 표출하였다. 8월 18일 문리과대학을 시작으로 공과대학, 농과대학, 상과대학, 교양과정부 교수들이 각각 교수회의를 열어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중심으로 한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는 곧 대학 전체에 급속도로 영향을 미쳐, 8월 23일에 교수협의회는 전례 없이 많은 6백여 명의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총회를 갖고 대학 자주성의 제도적 보장과 교수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는 ‘대학 자주화 선언’을 채택하였다. 교수 전체의 의사를 대표하여 교수협의회의 이름으로 자율화를 요구하는 성명서가 채택된 것은 1965년 이후 6년 만이었다. 교수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6개 항의 건의 사항을 요구하였다.

1. 대학의 자주성과 자율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2. 교수의 보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급여 체계를 확립하여 기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대우 개선을 하여야 한다.

3. 교수 임용 시의 초임 호봉을 올리고 승급 기간을 단축하여야 한다.
4. 학술 연구 활동에 절대 불가결한 문헌 정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5. 교수들의 연구 활동이 가능하도록 연구비를 대폭 확충하여야 한다.
6. 학사 운영 관리에 대한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문교부로부터 완전 독립될 수 있는 서울대학교설치령을 제정하여야 한다.



그림 2-3-8 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 총회(1980년 3월 4일)

이 결의에 따라 교수협의회는 서울대학교를 문교부에서 독립된 특수 법인체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서울대학교법연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정부는 대학제도개혁위원회를 총리 직속으로 두고 이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근본적으로 대학 자율성을 신장시키는 방향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다. 그리고 1972년 10월 유신체제의 등장과 함께 대학 자율화 움직임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사라졌다.

교수협의회는 1980년 3월 4일 열린 총회를 계기로 다시 대학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이 총회에서 교수협의회는 체질 개선을 결의하는 한편 변형운 교수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하는 등 임원진을 개선하고 교수 차원에서 주체적인 대학 개혁 논의를 추진해 나갔다. 이날 회의에서 총·학장을 교수협의회에서 선출하고, 교수 재임용 제도를 폐지하며, 교수가 처장이 되는 사무처를 신설하고, 교수협의회를 단순 심의 기관에서 의결 기관으로 하는 것 등의 의제를 토의하였다.

당시 회장이었던 변형운 교수의 회고에 따르면, 1980년 5월 10일을 기점으로 학생들이 학외로 진출하여 시위를 벌이고, 개헌 작업, 이원 집정제 개헌 음모에 대한 반대 등 조속한 민주화 조치를 요구하는 시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가두시위와 군부의 강경 대치를 막고 민주화를 촉진하는 데 힘을 보태기 위해 교수협의회에서는 5월 19일에 ‘서울대학교 교수 시국 선언’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5월 17일 저녁 무렵, 시안이 완성된 시국 선언문이 5월 17일 저녁 TV 뉴스에 일부 소개되었지만, 3시간 후인 5월 18일 0시를 기해 신 군부가 주도하는 군사쿠데타인 계엄령의 전국 확대가 발표되면서 시국 선언 발표는 무산되었다. 이후 변형운 교수는 교수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사표 제출을 강요받았다. 이로써 교수협의회를 중심으로 펼쳤던 대학 자율화를 위한 교수들의

활동은 무산되었고 이후 교수협의회 활동은 다시 중단되었다.

비록 교수협의회 활동은 중단되었으나, 계속되는 정부의 학원 자율화 침해, 민주화 운동과 학생 운동에 대한 탄압에 대해 1986년 4월 11일, 서울대학교 교수들은 '대학의 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의 견해' 라는 시국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이 선언문에 서명한 교수들은 비교적 소장층을 중심으로 한 48명이었다. 이를 통해 교수들은 대학의 자율·자치 보장과 이를 침해하는 정치적 압력·물리적 통제의 철회, 개헌과 민주화에 대한 철차 제시를 요구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개혁 요구를 지성적이고 비폭력적인 수단으로 표현할 것을 당부하였다.

## (2) 대학 자치의 시련과 교수회

총장 및 교수 인사에 대한 교수회의 동의권은 1961년 9월에 '교육에관한임시특례법'이 공포되면서 박탈되었다. 결국 총·학장 임명에 대한 교수회의 동의권이 없어지고 획일적이고 하향적인 임용 체제가 강화되었다. 1963년 11월에는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조교수 이상의 교직원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동의권이 인정됨으로써 다소 대학 자치가 살아나기는 하였으나 행정적, 관료적 통제는 더욱 심화되었다.

결국 1960년대 이후 단과대학의 교수회는 대학 인사에 대한 권한이 배제됨으로써 기능이 대폭 위축되었다. 교수회는 대학 운영의 주체적 참여자가 아니라 대학 운영의 보조 기구로서 기능할 뿐이었다. 더구나 학생 징계에 대해서도 특별한 경우 교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징계할 수 있도록 학칙에 규정되어 교수들은 자신들의 제자에 대한 징계에조차 참여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79년 12월에 발족한 학사조정위원회나 1980년 4월의 교수협의회 총회, 그리고 대학본부에서 마련한 학칙 개정 요구안에서는 교수회의 권한 강화를 주장하였다. 대표적으로 학사조정위원회의 '대학개혁구상'에서는 교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1. 대학의 운영은 교수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교수회는 교육, 연구, 학생 지도에 관한 의견 집약체이다.
3. 각 대학(원) 교수회는 학내 인사 위원의 선출, 총장의 학(원)장 임명 제정에 대한 동의에 관한 심의권을 갖는다.
4. 각 대학(원) 교수회는 전임 교수 1/3 이상의 요구에 의해서도 소집될 수 있게 한다.
5. 각 대학(원) 교수회에서 학과 교수회의 심의, 의결 사항을 결정한다.
6. 교수회의 의결 사항을 학칙에 명시한다.

7. 학과 교수회를 학칙에 규정한다.
8. 교수의 의견 집약체로서 전체 교수회 또는 각 대학(원)의 대표로서 구성되는 교수평의회를 학칙 상에 둔다.

대학본부에서 마련한 학칙 개정안도 교수회의 심의 사항에 인사 위원 선출권을 추가하고 교수회의 결정에 따라 학과 교수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들은 1980년 5·17 쿠데타 이후 신 군부의 등장으로 무산되었다.

### 3) 교수협의회를 비롯한 교수 단체의 활성화

#### (1) 교수협의회 부활

1987년 전국민적인 6·10 항쟁의 여파가 이른바 7·8월 노동자 대투쟁으로 이어지면서 사회 각계에 민주화 열기가 확산되었다. 이 과정에 서울대학교 교수들은 1987년 5월 1일 122명의 이름으로 ‘현 시국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발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 시국 선언에서 교수들은 4·13 호헌 조치를 비판하고 조속한 헌법 개정을 주장하였다. 시국 선언에 참여한 서울대학교 교수의 수는 전국 대학 중 가장 많았을 뿐 아니라, 원로·중진·소장 교수들이 두루 포함되었고, 11개 단과대학 43개 학과의 교수들이 폭넓게 참여하였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서울대학교 전체 교수의 의사를 집약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런 가운데 1987년 9월에 교수협의회가 다시 부활하였다. 9월 4일 문화관 소강당에서 455명(위임장 246명 포함)의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교수협의회 임시 총회가 열렸다. 1980년 4월에 총회를 개최한 이후 7년 만에 개최된 것으로, 이 자리에서 1980년 당시 교수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되었던 변형운 교수를 다시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하였고, 정관 개정과 교수협의회 활성화 방안, 대학 자율화 방안 등을 토의하였다. 교수협의회는 이날 정관 개정을 통해 이사회는 각 단과대학별로 교수 100인 이내인 단과대학은 2인, 100인 이상인 단과대학은 3인씩 선출된 이사로 구성하도록 결정하였다.

당시 평교수가 학내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로는 평의원회, 단과대학 교수회, 교수협의회가 있었다. 이 가운데 평의원회는 학칙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면 일종의 대의 기구로서 서울대학교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 하지만 평의원회는 총장

이 그 소집권과 평의원의 임명권을 갖고 있던 심의 기구로 사실상 유명무실하였고 교수들의 의사를 결집할 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게다가 교수회는 단과대학의 조직에 불과하며 서울대학교 전체 수준에서 교수들을 대표할 수 있는 전체 교수회는 없었다. 1980년대 후반 교수회는 학칙 개정으로 심의 기관에서 심의·의결 기관으로 바뀌고 심의 의결 사항도 약간 확대하지만, 그 한계는 여전히 존재하였다.

이에 비해 교수협의회는 학칙에 규정되지 않은 ‘임의 단체’였지만, 전체 교수를 회원으로 아우르고 독자적인 조직을 갖추어서 상황에 따라서는 대학 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대학 자율화를 위한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교수협의회가 재조직되거나 새로 조직되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은 그러한 사정을 반영한 것이었다.

## (2) 대학 자율화와 대학 운영 체제 개선을 위한 활동

활동을 재개한 교수협의회는 1987년 9월까지 자연과학대학을 제외한 18개 단과대학(원)별로 분회 구성과 이사 선출을 마치고 10월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공식 중인 5명의 부회장을 선출하고 대학자율화추진분과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또한 1968년부터 발간되었던 『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 News Letter』가 1975년에 그 발행을 중지하여 공식적인 소식지가 간행되지 않았는데, 이후 『교수협의회 소식』 제1호(통권 제12호)를 1987년 10월 발간하여 교수협회의 활동 상황을 대내외에 알리는 창구로 이용하였다.

교수협의회는 대학 운영의 자율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대학자율화추진분과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이 위원회는 대학 자율화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는 입장 하에 학칙 개정뿐만 아니라 대학의 자율화에 대한 제 문제를 검토하였다. 산하에 3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소위는 외국의 우수 대학과의 제도 비교를 통한 이상적인 민주 대학 방안을 연구하고, 제2소위는 대학 민주화의 선결 요건으로서 현재의 서울대학교설치령, 학칙 등을 검토하며, 제3소위는 외부 의견의 비판적 검토 및 전체 교수 의견 수렴 등을 연구하였다. 위원회는 이사회와 전체 총회를 거쳐 1988년 3월 자율화 지침을 최종 확정하였다.

1988년 3월 9일에 교수협의회는 ‘서울대학교 자율화 지침’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는 대학의 자율을 “대학 밖의 정치적 타율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 이르는 것, 대학 안에 웅크리고 있는 타율적 습성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대학과 정부, 대학 기구, 인사, 예산, 교육 및 연구, 입법 조치 등으로 항목을 나누어 서울대학교의 자율적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지적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가대학교육위원회 설치: 문교부 대학교육정책실을 폐지하고 가칭 ‘국가대학교육위원회’를 설치한다.
2. 법인이사회 구성: 총장, 동창회장, 국가대학교육위원회 추천 인사, 교수대의회 추천 인사 등 40~50인으로 구성하여 본교를 국가 설립의 법인체로 운영한다.
3. 대학 기구 개편: 현행 대학본부의 권한을 축소하여 집행 기구의 역할만 담당하게 하고 최고 의결 기구로 전체 교수들의 대표로 선출된 교수대의회, 단대 교수회, 학과 교수회를 둔다. 교수대의회는 총장 후보 및 법인이사회 이사와 총장 산하 각종 위원회 위원의 선출 권한을 가진다.
4. 총장 직선제 및 인사권 조정: 교수대의회에서 총장 후보 2~3인을 복수 추천하여 전체 교수가 직선으로 총장을 선출하고 각 단대 학장은 단대 교수회에서 각 단대 상황을 고려하여 선출한다.
5. 교수 재임용제를 철폐하고 행정 사무직 직원의 인사권은 총장이 갖도록 한다.
6. 교수의 신규 채용: 학과 교수회가 추천하는 후보자를 단대 교수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임용한다.
7. 예산 확보 및 사용: 정부 지원 경상 예산은 물가와 경제 성장을 감안해 ‘슬라이딩 스케일 제도’에 의해 매년 결정하고, 신규·임시 예산은 정부와 협의하며, 예산 확보에 있어 대학 밖의 간섭을 극소화시킨다.
8. 교육 및 연구: 전공 과정은 각 단대의 자율적 결정에 맡기고 학생들의 과외 활동은 학생들의 자율에 맡긴다.
9. 입법 조치: 본 지침을 구현하기 위한 입법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서울대학교 자율화 지침’에서는 정치적 통제에서 벗어나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가칭 ‘국가대학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서울대학교를 그 위원회 아래에서 법인체로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 현행 대학본부의 역할을 집행 기구의 역할로 축소하고, 의결 기구로서 전체 교수를 대표하는 교수대의회, 단대 교수회, 학과 교수회를 두자고 제안하였다. 또한 국가가 재원은 공급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미국과 영국의 대학 운영의 예를 들면서 예산의 국고 지원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 안의 실현을 위해 구체적인 입법 조치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대학교 자율화 지침’은 개교 이래 처음으로 전체 교수의 총의를 모아 대학 민주화의 기본 원칙과 구체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제안한 것으로, 외부 간섭으로 인한 대

학 자율의 장애 요인을 제거하고(서울대학교를 특수 법인화하는 ‘국가대학교육위원회’ 구성 제안), 대학 내부의 운영에서 권위와 책임의 분산을 통해서 교수의 참여 폭을 넓힘으로써 대학 운영의 합리성과 자발성을 제고(총장 직선제, ‘교수대의회’ 구성 제안)하려는 것이었다.

이어서 1988년 4월 8일에 교수협의회는 ‘대학 자율화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결의문에서 교수들은 ‘서울대학교 자율화 지침’의 근본 정신을 재확인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입법을 비롯한 제반 조치를 관계 당국에 거듭 촉구하였다. 교수협의회는 문교부와 학교 당국이 추진 중인 평의회 구성에 대해, 그것이 교수만의 모임이 아닌 외부 인사의 개입이며 총장의 자문 기관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원칙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그 대안으로 교수대의회를 제안하였다. “평의회는 의결권 없이 심의권만을 갖고 있는 대학본부의 신규 심의 기관이지만 대의회는 명시적으로 대학의 학사, 인사 및 예산에 관한 의결 기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교부가 교수협회의 자율화 방안을 완전히 무시하고 대학평의회 제도로써 대학의 자율화를 도모하는 것이 호도하려는 것은 진정한 대학 자율화에 역행되는 처사라고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같은 날 교수협의회는 연구 요건 조성을 위한 건의문도 채택하였다. 건의문은 제반 연구 시설의 개선과 교수 처우의 합리적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1988년은 총·학장 선출 문제로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되고 교수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교부가 국공립대총·학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시안을 발표하자 교수협의회는 이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서울대학교 자율화 지침’에서 제안한 총장 직선제를 고수하기로 하고, 11월에 이 의견을 총장에게 발송하였다. 결국 교수협회의 제안이 평의회, 기획위원회, 학장회 등을 거쳐 총장 선출 제도에 반영되었다.

한편 1988년 2월 15일에 서울대학교를 포함한 전국 10개 국립대학교의 교수협의회 회장들이 모여 ‘전국국립대학교교수협의회회장단’(이하 국교협)을 결성하였다. 이는 교수협회의 법적 위상을 확보하고 대학의 민주화를 제도적으로 보장받기 위한 대학 간 공동 노력의 일환이었다. 상당수 국립대학교에서 교수협의회가 대학 당국과 마찰을 빚었고 교수협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논란이 일어 이에 대한 집단 대응이 불가피해진 것이 국교협 탄생의 직접적인 배경이었다. 국교협은 이후 서울대학교의 문제를 전체 국립대학교라는 넓은 시야에서 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 (3) 교수 권익 증진, 교육·연구 여건 개선과 학문 후속 세대 지원을 위한 활동

교수협의회는 1988년 3월에 교수권익증진분과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교수 권익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보고안을 제출할 활동 계획을 세웠다. 교수권익증진분과위원회에서는 두 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소위에서는 교수의 권익에 관계되는 문제를 다루고, 제2소위에서는 교수의 복지와 후생에 관계되는 문제를 다루도록 하였다. 교수권익증진분과위원회는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통해 ① 정액 연구비의 인상 추진, ② 정년 퇴직 교수의 명예 교수 발령을 퇴임과 동시에 하도록 추진, ③ 교수의 해외 여행 절차의 간소화 추진을 중점 사업으로 결정하였다.

교수권익증진분과위원회는 1989년 5월 교육 및 연구 여건 개선을 위한 건의서를 확정하여 총장 및 관계 부처에 발송하였다. 그 내용은, 연구 여건 개선을 위해 연구비 인상과 조교 인원 증원, 정부 지원 확대, 대학원생에 대한 지원(논문 작성 보조비)과 병역 특혜 요청, 도서관의 획기적인 보강, 교수 재임용제 폐지와 주당 책임 강의 시간의 하향 조정, 안식년 제도 실시 등이었다.

교수협의회는 1989년 4월에 대학자율화추진분과위원회를 해체하고 이 사업의 내용을 포괄하는 대학발전분과위원회를 상설 기구로 설치하였다. 교수협의회는 대학발전분과위원회의 활동을 바탕으로 1990년 3월에 ‘대학 발전에 관한 결의문’을 발표하였다. 이 결의문에서 교수들은 대학이 본질적으로 자유로워야 하며 대학의 모든 운영을 전적으로 대학인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전제하였다. 그리고 정부에 대하여 서울대학교가 선진국 수준의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실천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1. 교수의 연차적 증원.
2. 연구 교수 제도 확대.
3. 대학원 정원의 자율적 조정.
4. 대학원생 병역 특례 조치의 공평한 시행.
5. 대학원 논문 작성 보조비의 지원.
6. 도서관 및 연구 기기의 선진화.
7. 대학 부설 연구소의 획기적 강화.
8. 농학 캠퍼스 이전의 조속한 실현.
9. 대학병원을 포함한 교육 및 연구 시설 확장을 위한 부지 확보.



1990년 4월에도 ① 문교부 연구 보조비 100% 인상, ② 대학원생에게 한국과학기술원 수준의 학위논문 작성 보조비 지급, ③ 도서관 선진화를 위한 도서 구입비 대폭 증액과 도서관 전산화, ④ 시간 강사로 현실화, ⑤ 교수 1인당 학생 수를 1:15로 감축할 수 있도록 매년 80~90명의 교수 정원 증원 등의 건의 사항을 결의하였다.

한편 1990년과 1991년에는 교육부가 대학 교육 공무원의 재임용과 국·공립대학교 총·학장 추천에 관하여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교수협의회는 교육부의 개정안이 사회의 민주적 개혁과 함께 진행되고 있는 대학 자율화와 민주화 정착 노력을 저해하는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특히 교육부가 제시한 총장 후보 추천 방식이 교수와 학생의 직접적인 참여를 막고 있으며, 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한 총장 선출 방식이 결국 총장 직선제를 봉쇄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반대 의견을 개진하였다. 또한 교수협의회는 국립대학교 교수협의회와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하여 정년 보장 교수의 정원을 교육부 장관이 정하도록 한 조항의 폐지를 요구하여 결국 이를 총장이 정하도록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1992년 4월에는 ‘대학의 진정한 자율화를 촉구하는 우리의 결의’를 채택하고, 이와 함께 ‘교육과 연구여건 개선을 위한 건의문’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교육부가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여 정년 보장 교수의 수를 하향 조정하려는 것은 대학에 대한 통제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대학의 자율성과 다양성 추구라는 관점에서 대학별 본고사 시행 방안의 개선과 정착을 위해 대학 구성원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는 결의를 표명하였다.

교수협의회는 1992년 10월에 ‘학문 후속 세대 지원 방안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 자리를 통해 ‘학문 후속 세대’의 개념을 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학문 후속 세대를 구체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토론했다. 학문 후속 세대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원 박사과정 학생에게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편중되지 않은 균형 있는 지원이 필요하며, 지원 정책을 위해 지원 부서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 학문 후속 세대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연구 활동을 진작시키려는 시도는 교수협의회가 주최한 토론회가 처음이었고, 이후 학내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이는 서울대학교 구성원들이 대학 발전 문제를 학문 생산 체제라는 시각에서 보기 시작했음을 말해 준다. 1993년 이후에도 학문 후속 세대에 대한 지원 방안을 계속 논의하였다. 인문사회계를 대상으로 지원 방안에 대한 좌담회를 개최하였고, 각 단과대학별 실정에 맞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1994년 4월에는 ‘교육과 연구 여건 개선을 위한 건의문’을 발표하였다. 학문의 축적과 인재 양성이라는 대학 본연의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교육 정책의 전환과 과감한 교육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으며, 교육 현장의 당면 과제들 가운데 시급한 두 가지 해결 과제를 정부 당국에 건의하였다. 첫째로는 강의와 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임 교수를 대폭 확충하여 교수 대 학생 비율을 개선하는 것이 요구되며, 연구 교수 제도와 안식년 제도가 제도화되고, 현재 대다수 사립대학에 비해 현저히 낮은 국·공립대학 교수들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둘째로는 미래의 교육과 학문의 담당자로서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수료한 연구 인력을 위해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재정 지원이 요구되며, 특히 박사과정 재학생의 경우 실질적인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한 장학 제도가 실시되어야 하고, 시간 강사들이 학문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강사로 수준을 현행보다 두 배 이상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994년 11월에 ‘학문 후속 세대 지원 방안에 대한 간담회-이공 계열의 경우’라는 주제로, 1995년 9월에 ‘학문 후속 세대 지원 방안-인문·사회 분야’라는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고, 1998년에는 ‘시간 강사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여는 등 학내 의견을 모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지속적인 사업을 펼쳐 나갔다.

1996년 11월에는 교수협의회 산하 ‘교내제도개선위원회’에서 「교수 채용의 성비 불균형 시정 방안」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의 여교수 비율이 6~7%에 지나지 않으며, 교수 지원자의 평가 작업 이면에서 각종 편견으로 인한 여성 차별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인사 관련 법규에 성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마련하고, 여성 교수의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999년 10월 ‘서울대학교의 현실: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에서 교수 처우개선 문제를 제기하였다. 서울대학교 교수들의 급여 수준은 다른 국립대학교에 비해 연평균 100만 원 이상 적고, 사립대학교에 비해서는 30% 정도 적은 수준으로, 열악한 급여 수준은 일부 교수의 이직 현상으로 이어져 우수 인력의 확보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하였다.

2003년 4월에 교수협의회는 교수들의 급여 수준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교수처우 현실화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여러 방안을 연구하였다. 12월에는 이에 대한 콜로кви움을 개최하고, 이를 정리하여 2004년 2월 「서울대학교 교수 처우 현실화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여기에서는 다른 대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서울대학교 교수

들의 급여 수준 및 기타 열악한 교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실태를 조사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정리하여, 교수들이 안정적으로 학문 연구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본부에 요청하였다.

#### (4) 서울대학교의 위상과 교육 개혁 방향에 대한 논의

1990년대 후반부터는 교수협회의 활동이 한국 사회에서 차지하는 서울대학교의 위상과 교육 개혁의 방향에 대한 논의로 집중되었다. 이와 관련한 교수협회의 활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995년 '서울대학교법에 대한 좌담회' 개최.
- 1997년 「서울대학교법에 대한 교수협의회안」과 서울대학교법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제출.
- 1999년 '서울대학교의 현실: 무엇이 문제인가?' 심포지엄 개최.
- 2001년 「서울대학교 발전을 위한 설문조사 보고서」 발표.
- 2001년 '국립대학 발전계획안' 대토론회 개최.
- 2002년 '국립대학운영에관한특별법(안) 검토 및 서울대학교 운영 체제 개선' 대토론회 개최.
- 2002년 「"Blue Ribbon Panel" 보고서에 대한 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의 견해 및 성명서」 발표.
- 2003년 '한국 사회에서 서울대학교는 무엇인가?' 대토론회 개최.
- 2004년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가?' 대토론회 개최.
- 2005년 「세계 속의 서울대학교: 국제적 평가에 대한 우리의 견해」 발표.
- 2005년 '국립대학 법인화, 무엇이 문제인가?' 대토론회 개최.

이 중 서울대학교법·법인화와 발전 계획에 대한 것은 앞의 1장과 2장 관련 부분에서 서술하였다. 여기에서는 앞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1999년 10월에 개최된 '서울대학교의 현실: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 심포지엄은 서울대학교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교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먼저 서울대학교는 기초 학문에 중심을 두는 대학이 되어야 하며, 기초 연구에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일반 교수들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대학평의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2003년 10월의 '한국 사회에서 서울대학교는 무엇인가?' 라는 토론회는, '서울대 폐

교론'을 비롯한 학내외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한국 사회에서 서울대학교가 어떤 존재이고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가를 모색하려는 취지에서 개최되었다. 서울대학교가 나아갈 방향은 '기초 과학 육성과 연구 중심 대학'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였고, 이를 위해 이공계 학생을 위한 교양 과정을 확충하고 학문 특성에 따라 다양한 교과 과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일부 참석자는 서울대학교 구성원들이 여전히 '서울대 보호'로 일관한다고 비판하기도 하였다.

2004년 10월에 열린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는 한국의 현실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국제 사회 속에서 미래 한국의 좌표를 모색하는 가운데 한국 사회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 처방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대학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를 모색하기 위한 것이었다. 여기에서는 '지성의 위기와 그 역사적 배경', '변화하는 국제 사회와 한국의 진로', '한국 사회의 미래와 대학의 과제' 등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 (5) 여교수회

1987년 6월 16일에 각 단과대학에서 28명의 교수가 가칭 '서울대학교 여교수협의회'라는 이름으로 모임을 갖고 조직 형태를 신중하게 논의하기 위해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1988년 6월 25일에 모임의 명칭을 여교수회로 결정하고 정관과 조직 형태를 결정하였고, 임원진 구성을 거쳐 1989년 11월 21일에 정식으로 발족하였다.

여교수회는 "서울대학교 여교수 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여교수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학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였고, 회원은 서울대학교 여교수로서 전임 및 기금 교수로 하였다. 산하에 분과 위원회를 만들어 친목분과, 발전분과, 지원분과를 두었다. 친목분과는 회원 관리와 경조 사항 및 친목 모임을 주선하는 일을 하고, 발전분과는 대학 및 회원의 발전과 여교수의 권익을 다루며, 지원분과는 재학생 및 졸업생 중 여학생의 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을 담당하였다.

1991년도부터 본격적인 여교수회의 사업이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일년에 두 차례씩 춘계·추계 학술 모임을 가졌고, 1991년부터 여교수회 회장이 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 당연직 부회장으로 참여하였다. 이는 여교수회의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교수협의회에서도 함께 협의하는 계기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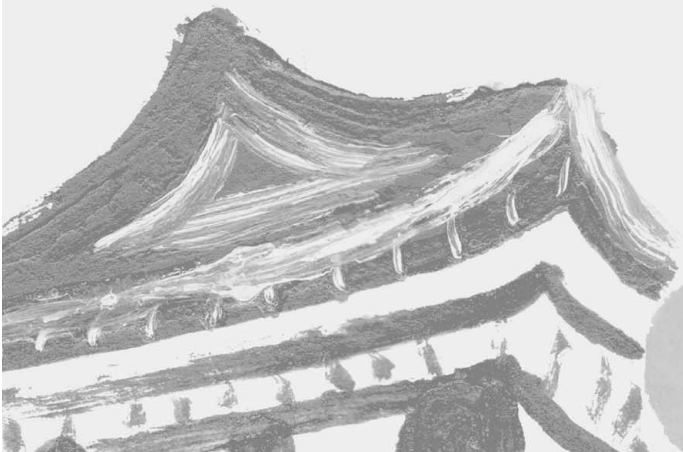
여교수회는 교수 채용에서 여성 지원자가 성차별에 의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대학본부뿐만 아니라 각 단과대학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여성 지원자를 배려하는

정책을 펴도록 하였다. 2001년 9월에는 ‘여교수 임용 비율 제고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하였다. 여기에서 여교수회는 여교수의 비율을 전체 학문 연구자 가운데 여성 학문 후속 세대가 차지하는 비율과 같은 수준으로 높일 것과 이를 달성할 때까지 같은 능력의 소지자라면 여성을 우선적으로 임용하고 이를 시행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대학 평가에서 가산점을 주는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여학생들의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 2004년 11월에는 ‘서울대학교 여학생 진로·경력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상과 같이 교수 단체는 대학 자치와 자율성의 확보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우리 사회의 민주화에도 노력하였다. 초기의 교수회는 단과대학에 따라 강력한 힘을 가지고 대학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총장과 교수의 임명에 동의권을 갖기도 하였으나, 대학 행정이 본부로 집중되면서 단과대학 단위의 교수회는 그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교수들은 교수협의회를 결성하여 대학 자율화와 운영체제 개선을 위해 활동하였고, 교수 권익 증진과 교육·연구 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였다. 또한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도 집단적인 목소리를 내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제 사회 민주화와 대학 자율성이 어느 정도 확보된 상황에서 교수 단체의 활동도 새로운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 또한 대학 운영에 교수들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교수 단체의 공식 기구화를 추진하고 있다.



제 3 부  
교육





## 제1 장 입시 제도의 변화

대학 교육은 학생 선발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대학입학 시험의 일차적 목표는 수학적격자를 정확히 가려내는 것이다. 교육열이 유난히 높고, 학력이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비중이 큰 한국 사회에서 대학 입시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지대하다. 특히 서울대학교의 입시 제도는 그 정점에 있다. 그렇기에 정부의 대학교육 정책에서 입시 정책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각 대학의 입시는 정부 정책에 크게 좌우된다. 이는 서울대학교 역시 예외가 아니다.

본 장은 정부 입시 정책과의 밀접한 관련 하에 서울대학교 입시의 전형방식과 전체 모집정원의 변화 등을 다룬다. 그러나 정부 정책에 대한 서술에만 치중하지 않고 서울대학교 입시의 특색을 드러내려고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본교의 각종 연구보고서를 통해 입시에 관한 서울대학교의 구상을 이해하고, 『대학신문』을 통해 학내 구성원들의 반응을 살폈다. 사회의 여론을 알아보기 위해 일반 언론들도 참고하였다. 기본적으로 최근 10년사를 제외한 이전 시기는 기존 교사를 많이 참조하였으나 새롭게 서술한 부분도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기존 교사에서는 공백 상태였던 1950년대 서울대학교의 입시 상황을 『대학신문』을 참조하여 새로 서술하였다.

## 제1 절 초창기 '자율적' 입시제도(1946~1961년)

### 1) 창건과 전입·입시제도

해방 직전 일제 하의 고등교육은 유일한 대학인 경성제국대학(2년제의 예과와 본과 3년제)과 고등전문기술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학교(3년제)로 이원화(二元化)되어 있었다. 해방 후 미군정청 학무국의 자문기관으로 고등교육 개편의 설계를 담당한 조선교육심의회 고등교육분과위원회는 이를 단일화하여 모두 4년제 대학으로 개편할 것을 구상하였다. 즉, 미국식의 새로운 6-3-3-4제에 맞춰 12년의 보통 교육을 마치고 4년제 대학에 진학하게 하고, 의과대학은 예과 2년을 포함해 6년제를 계획하였다. 이러한 신제(新制) 대학은 학년 및 학기제도 일제 식민지기의 4월에 시작하는 3학기제를 폐지하고, 9월에 시작하는 2학기제를 채택하였다. 단, 과도적으로 신제 대학에 2년제의 대학 예과와 3년제의 전문부를 같이 설치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당시 4년제였던 중학교 졸업생이나 전문학교 재학생은 신제 대학의 예과나 전문부를 마친 다음 대학 2년에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대학교는 1946년 개교와 함께 이 신제에 따라 각 단과대학별로 신입생을 모집하고, 전문부와 예과로도 신입생을 모집하였다. 당시 본교의 입학지원 자격은 아래 여러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주어졌다.

1. 경성대학 예과 1945년도 제2학년 수료예정자
2. 경성대학 1학년 수료예정자로서 특별시험에 합격한 자
3. 중등학교 제4학년 졸업 또는 그 예정자로서 특별시험에 합격한 자
4. 각종 전문학교 1945년도 제1학년 또는 제2학년 수료예정자로서 특별시험에 합격한 자

신입생 외에 2·3·4학년은 경성대학 본과 1·2·3학년 학생들을 전입시켜 충당하였다. 이러한 전·입학 제도는 1945학년도 입학생이 졸업하는 1948년까지 계속되었다.

그 후 1947년 8월 이사회는 '국립서울대학교입시규정'을 마련하고 여기서 입학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다. 이때 입학지원 자격을 바꾸어, '당국의 인정을 받은 6년제 중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중등학교 졸업성적이 대학교에 진학하여



능히 최고학부의 교육을 계속할 수 있다고 인정된 자'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입학자격이 충분하지 못하더라도 '외국에서 교육을 받은 자, 잡종(雜種) 학교 졸업자, 2년 이상 학교에 적을 갖지 못한 자'에 한해 일시적으로 1년간 가입학(假入學)을 허용하였다. 이러한 가입학 제도를 만든 이유는 신학제와 함께 결정한 과도 조치에도 불구하고 1947년 9월 현재 입학자격을 가진 자가 매우 적기 때문이었다.

1948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은 8월에 열린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학칙으로 명문화되었는데, 아래의 여러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입학지원 자격을 준다고 규정하였다.

1. 6년제 각종 중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구제(舊制)대학 예과와 전문부 2학년 수료자 및 예정자
3. 대학입학자격검정시험합격자
4. 기타 문교부장관이 위의 사항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

이중 4.에 해당하는 자는 예비시험을 거쳐야 했는데, 이들은 주로 각종 대학관(大學館), 정규대학 야간부 및 신학교 졸업자, 북한, 만주, 일본 등지에서 온 학생들이었다. 예비시험은 국어, 수학, 영어가 필수과목이었고, 물리, 화학, 역사, 지리 중 한 과목을 선택해야 했다.

그런데 개교 초기에는 일본인 학생이 모두 귀국했기 때문에 학생 수가 정원에 크게 미달하였다. 그래서 다른 교육기관으로부터 다수의 편입생을 받아들여야 했다. 편입생 선발규정은 '6년제 중등학교 이상의 우수한 학교로부터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 한한다.'였다. 이렇게 편입한 학생은 1946년 346명이었고(문리대 339명, 법대 7명), 1947년 8명, 1948년 172명, 1949년 158명이었다.

정규학생들 외에도 별과생(別科生), 청강생, 위탁생 등의 제도가 있어 본교에서 수학할 수 있었다. 별과생은 다시 두 종류로 나뉘었는데, 정식으로 본교에 입학할 수는 없으나 직업관계상 경력과 실력이 전문계통에 속한 과목을 수학할 수 있는 자와 대학입학자격은 있으나 직업 등의 관계로 수업시간마다 등교하여 수학할 수 없는 자가 있었다. 별과생은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정규수업이 가능한 경우, 여석이 있으면 해당 정규 학년에도 편입할 수 있었다. 그런 경우 별과생으로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았다. 이들은 정규 등록금 대신 학점당 계산한 수학기금을 납부하였으며, 1학기 16학점 이상 수강할 수

〈표 3-1-1〉 각 학년도별 입학 상황(1946~1950)

대학구분	1946년도		1947년도		1948년도		1949년도		1950년도	
	학 수	부 수	학 수	부 수	학 수	부 수	학 수	부 수	학 수	부 수
대학명	신입 편입 재입 소개 전문예과 계		신입 편입 재입 소개 전문예과 계		신입 편입 재입 전문 소개 예과 계		신입 편입 재입 소개		신입 편입 재입 소개	
석사과정			105		105		100	87	87	136
대 학 원										
박사과정										
연구생										
계		105	105		105	100	100	87	87	136
공과대학	217	409	305	931	175	830	210	1,040	327	388
농과대학		160	36	36	36	190	190	221	221	260
문리과대학	248	339	824	1,411	285	597	87	16	700	409
대 의예과	120	120	120	120	120	120	120	124	124	128
치의예과										
미술대학	61	61	13	13	13	45	45	50	50	70
법과대학	88	95	222	317	165	165	323	232	11	243
사범대학	156	184	340	193	193	181	374	214	10	231
상과대학	34	377	411	152	148	300	348	55	7	403
수의과대학			30	7	37	28	65	22	20	42
약학대학										
음악대학										
의과대학	200	200	200	170	108	108	149	182	1	183
치과대학		60	60	60	60	60	60	100	100	120
계	1,124	346	1,470	1,228	1,313	4,011	1,276	8	1,284	208
						209	1,701	2,898	172	23
							3,363	2,217	158	14
										2,473
										101
										1
										2,559

출처: 서울대학교20년사편찬위원회, 1966 『서울대학교20년사』, 524쪽.

없었다.

청강생은 여석이 있을 경우에 한해, 실력고사(입학고사로 대체)를 거친 자에게만 허용하였다. 이들은 청강료를 납부하였으며, 소정의 자격을 갖추면 정규 학생에 편입하고, 기존 취득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청강 기한은 1년이었으나, 신청하면 연장할 수도 있었다.

위탁생은 소속기관장이 위탁한 관공서 재직자에게 허용하였으며, 이들은 관비로 교육을 받았다. 이들은 학생정원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학점도 인정되지 않았고, 학위도 수여하지 않았다.

개교 초기 입학시험은 당시의 나라 사정을 고려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해 비교적 쉽게 출제하였는데, 전형 요소는 다음과 같았다.

1. 필기시험 성적
  - 필수과목: 국어, 수학, 영어, 사회생활(역사, 지리, 공민(公民))
  - 선택과목: 각 대학 사정에 따라 1과목
2. 신체검사서
3. 이력서
4. 종전의 학업성적
5. 구두시험성적
6. 성행(性行)

한편, 해방 후 국내 최초로 설치된 대학원 석사과정의 입학자격은 다음과 같았다.

1. 신제(新制)대학을 졸업한 자
2. 구제(舊制)대학(3년제)을 졸업한 자
3. 구제 전문학교를 졸업한 후 3개년 이상 연구실적이 있는 자
4. 외국에서 대학 또는 전문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위의 각 항과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가운데 하나의 항에 해당하는 자

## 2) 전쟁 기간 및 환도 후의 입시제도

서울대학교는 한국전쟁 기간에도 신입생을 받기 위한 입학 전형을 계속 실시하였다.

전시임에도 비교적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였는데, 이는 배움에 대한 열망 때문이기도 했지만, 대학생은 징·소집이 보류되는 특혜를 받았기 때문이기도 했다. 하지만 전란이 장기화하자, 정부 특히 국방 당국은 국방력 강화를 위하여 대학교 입학생 수를 제한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1952년 문교부는 신입생 모집 인원을 자연 과학 계열은 정원의 100%, 인문학 계열은 75%, 사회 과학 계열은 50%(1953년도에는 75%)로 제한하는 소위 '전시 학생 정원제'를 하달하였다. 반면 전쟁 중 수요가 급증한 의학계는 정원의 50%를 증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병역 의무자가 아닌 여학생, 상이군인, 소집 연령 초과자는 이 제한을 받지 않았다.

한편 전시 상황에서 편입 제도를 이용하여 학생이 되는 사람들이 많았다. 우선 1951학년도부터 북한 출신 학생들을 청강생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이들은 일정 기간이 경과한 뒤 정규 학생으로 편입할 수 있었다. 1951년 9월 현재, 북한 출신 청강생 수는 모두 100명이었고, 그 후 1953년까지 매년 상당수 북한 출신 학생들이 청강생으로 편입하였다.

다음으로 타 대학생 중 실력 고사에 합격한 자도 정원에 여유가 있는 학과에 총장의 허락을 받아 편입할 수 있었다. 이 학사 편입은 병역과 관계없는 자와 현역 군인에게만 허용하였는데, 단 현역 군인의 경우 책임 있는 소속 기관에서 취학해도 좋다는 추천서를 내주어야 가능했다.

입학 지원 자격은 1951~1952학년도의 경우, 전쟁 전 규정에다 초등학교 교원 제1종 시험 합격자에게도 기회를 주는 것을 첨가하였다. 그리고 1953학년도에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다.

1. 고등학교 또는 사범학교를 졸업한 자 및 그 예정자
2. 대학입학자격검정시험 합격자
3. 문교부 장관이 지정한 학교를 졸업한 자
4. 외국에서 12년 이상 학교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그 외 전시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하여 상이군인, 제대 군인들에게 입학시 특전을 부여하였다. 1952년 2월에 학장회는 상이군인들의 경제적·신체적인 면을 고려하여 가급적 그들을 취학시킬 것을 결의하였다. 문교부도 1953년 4월, 상이군인에 관해 연령 제한을 적용하지 말 것, 입학이 곤란할 경우 별과생 또는 청강생으로 받아들일 것, 체조,

보건, 교련 등의 학습이 곤란한 과목은 면제 혹은 수업 성적에서 제외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교직원 자녀에게도 특전이 있었다. 문리과대학의 경우, 총장·부총장 및 문리과대학 교수의 직계 자녀에게 명예 제대자와 동일한 특전을 주었고, 타 대학 교수의 직계 자녀는 합격권 내에 들었을 때만 제1·2지망을 고려해 주기로 하였다.

1952학년도 입시는 4월 8일~9일 이틀간 부산, 대구, 전주, 광주, 수원 등 전국 5곳에서 필기시험을 치렀다. 필기시험은 공통 과목으로 국어, 영어, 수학, 사회생활이 있었고, 선택 과목으로 하나 또는 두 과목을 봐야 했다. 10일과 11일에는 구술시험과 신체검사가 있었다. 특기할 점은 전시 하에 과학열이 고조되어 과학 계통으로 많은 학생들이 몰렸다는 점이다. 실례로 공과대학은 375명 모집에 1,350명이 지원하여 3.5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의과대학은 120명 모집에 900명이 지원하여 7.4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1953학년도 입시부터 서울대학교는 대학 본위의 문제 출제에서 벗어나, 고등학교의 수업 실정을 참작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는 대학 입시가 중 고등학교 교육에 끼치는 지대한 영향을 고려한 조치였다. 그리하여 1952년 10월의 교무과장 회의는 고등학교와 대학 교육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수개월 간 국내 각 고등학교의 교과 내용과 수업 실태 등을 세밀히 파악하기로 하였다. 또 그해 11월에는 서울대학교 교수와 고등학교 관계자들이 모여 고등학교 수업을 시찰하고, 고등학교 교과 내용을 토의하기도 하였다.

1954학년도 입시는 서울대학교가 부산에서 서울로 돌아온 후 처음 실시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해 정부는 '대학입학 국가연합고사'를 신설하여 사상 처음으로 대학 입시를 국가가 주관하려 하였다. 이 시험은 대학별 본고사에 앞서 실시하는 일종의 대학 입학 자격 고사와 같은 것이었는데, 대학을 징집 유보 수단으로 악용하거나, 대학의 재정난 해결을 위해 자격 미달 학생을 입학시키는 폐단을 막아 대학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었다. 단, 군대 징·소집 대상이 아닌 여학생과 제대 군인은 이 시험을 통하지 않고도 대학에 지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학의 자유를 침해하고 교육의 민주주의적 발전을 저해하며, 대학 진학 희망자에게 이중의 시험 부담을 준다며 반대하는 여론이 많았다. 그럼에도 문교부는 이를 강행하여 결국 1953년 12월 28, 29일 양일간 시험을 실시하였다. 시험 과목은 필수 과목으로 국어, 영어, 수학, 사회생활이 있었고, 선택 과목으로 과학 또는 실업(농업, 상업, 공업, 수산업)이 있었다. 지원자는 29,625명이었는데, 그중 25,360명이 합격하여 85%의 합격률을 보였다.

그런데 1954년 2월 26일, 갑자기 내려진 대통령령에 의해 이 시험의 효력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정부는 수험생의 이중 부담, 여학생과 군필자들에 대한 특혜를 그 이유로 제시하였으나, 사실은 일부 고위층 자녀들이 시험에서 대거 탈락하였기 때문이었다. 또 시험 직후부터 전국 곳곳에서 ‘커닝’을 비롯한 각종 부정 행위가 만연하였다는 지적이 많았다. 갑작스런 정부 발표로 인해 각 대학의 입시는 예정보다 늦어졌다. 서울대학교도 문교부 지시에 의해 일정을 10일 늦춰, 3월 5,6일 필답 고사를 실시하고 7,8일 구술시험과 신체검사를 시행하였다. 경쟁률은 2,700명 모집에 13,232명이 지원하여 4.9 대 1이었는데, 특히 상과대학과 의과대학이 7 대 1(2106/300), 7.4 대 1(972/120)로 가장 높았다.

이해에는 또 전쟁 직후라 지원 자격에 특이한 사례가 많았다. 가령 제대자 중 복한 출신자로서 대학 1학년을 수료했다는 해당 도지사의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제대 확인 증명서 제출자 및 육·해·공군 사관학교 퇴학자로서 퇴교 증명서를 소지한 자에게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다. 상이군인에게는 정원의 1할 내에서 입학을 고려해 주었다.

이후 1955~1957학년도 입시는 전형 방식엔 큰 변동은 없었고, 다만 고교생의 자연 증가로 인해 경쟁률은 계속 높아만 갔다. 1955학년도의 경우 2,720명 모집에 14,616명이 지원하여 평균 경쟁률이 5.4 대 1을 기록하자, 당시 『대학신문』은 이를 “천당 가기보다 좁은 대학 진학의 문”이라 보도하였다. 1956학년도는 전해와 같은 모집 정원에 14,857명이 지원하여 경쟁률은 5.5 대 1로 조금 더 높아졌다. 1957학년도는 입시 과목에 약간 변화가 있어, 국어와 수학이 심화 정도에 따라 각각 (1), (2)로 분화되었다. 그래서 문리과대학 문학부는 국어(2)와 수학(1)을, 이학부 및 의예과는 국어(1)과 수학(2)를 필수 과목으로 하였다.

문교부는 1958학년도 입시부터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일류 고등학교로 학생들이 집중하는 현상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새로운 입시 제도를 도입하려 하였다. 문교부는 당시 고등학교가 입시 준비를 위한 영어·수학 학원처럼 되었다고 보고, 정원의 1할은 고등학교 내신 성적만으로 시험 없이 전형하며, 나머지는 필답 및 구술 70%, 서류 전형 30%를 반영한 점수로 선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러한 내용의 문교부안이 발표되자 “각 고교의 지적 수준이 다르고, 교과목이 다른데 어떻게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척도로 평가할 것인가”, “내신 성적의 허위 기재와 부정은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등의 우려가 제기되었다. 서울대학교는 1957년 10월 21일, 총장과 교학국장, 각 단과대학의 교수 20명 등으로 입학시험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문교부안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12월 9일에 입시안을 발표하였는데, 서울대학교는 문교부안 가운데 ‘1할 무시험 선발제’는 도입하지 않고, 고교 내신 성적만 어느 정도 고려하기로 하였다. 또 사회를 공통 필수 과목에서 제외하고, 국어(1), 국어(2)를 다시 하나로 통합하고, 선택 과목을 두 과목으로 한 것도 특징이었다.

1959학년도 입시는 선택 과목을 변경하여, 인문계와 자연계를 막론하고 과학 과목 중 1과목을, 사회 과목 중 국사를 포함하여 2과목을 반드시 선택하게 하였다. 이는 서울대학교 사상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 고교 과정에서 자기 계열에만 편중된 공부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였는데, 결국 수험생의 부담이 이전에 비해 증가하였다. 이해 입시는 2,955명 모집에 12,444명이 지원하여 평균 4.2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과학 방면에 대한 관심 증가로, 종래 인문계에 학생들이 몰리던 현상이 변하여 공과대학에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였다. 그중 원자력공학과는 20명 모집에 294명이 지원하여, 15 대 1이라는 경이적인 경쟁률을 기록했다.

1960학년도엔 개교 이래 최고 지원자 수를 기록하였다. 이는 모집 정원의 증가에 따른 현상이기도 했는데, 2,930명 모집에 14,159명이 지원하여 4.83 대 1을 기록하였다.

‘4·19 혁명’ 후 처음 맞는 1961학년도 입학시험은 입시 과목에서 독어, 불어, 중국어 등 제2 외국어 과목을 제외한 것이 논란이 되었다. 1960년 11월에 개최된 학장회에서 1961학년도 입시 과목을 국어, 수학(1)·(2), 영어, 사회 및 과학(물리, 화학, 생물, 지학 중 택 2)의 5개 과목으로 한정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내용이 알려지자 전국의 고등학교는 물론 제2 외국어 교육계에서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및 사범대학의 독어, 불어, 중국어, 언어학 4개 학과도 재고를 요청하였다. 결국 학장회는 이전 결정을 번복하게 되었고,



그림 3-1-1 1955학년도 입학 시험 실시 풍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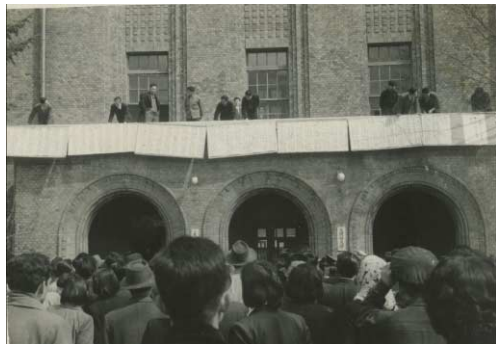


그림 3-1-2 1955학년도 입학 시험 합격자 발표 광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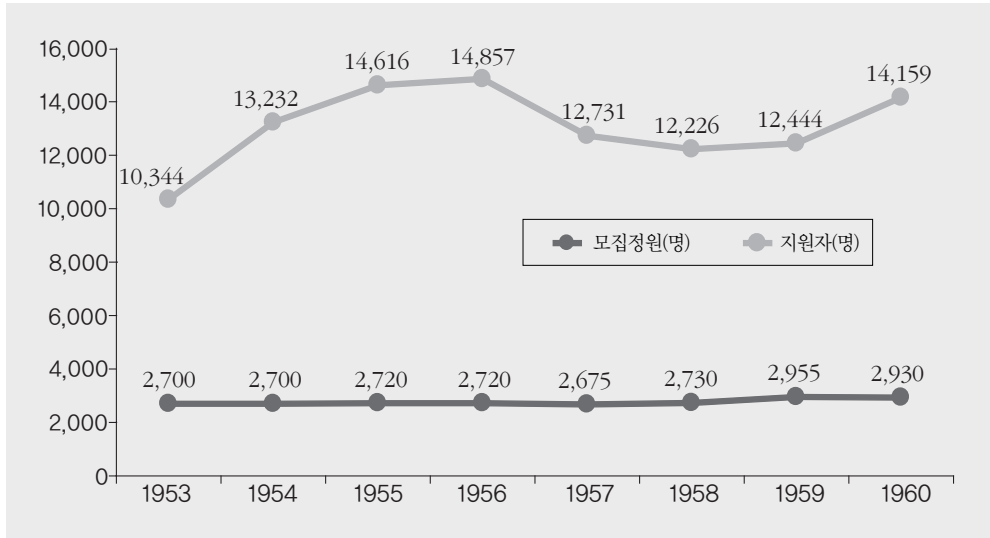


그림 3-1-3 학사 과정 모집 정원과 지원자 추이 (1953~1960년)

실제 시험에서는 문리과대학, 사범대학, 상과대학 및 의과대학이 제2 외국어를 선택 과목으로, 법과대학은 필수 과목으로 채택하였다.

개교 이래 1950년대까지 서울대학교는 정부의 '자유방임적' 대학 정책에 따라 자체 입학고사만으로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61년 군사 정권 등장 이후 정부가 대학 입시에 적극 개입함에 따라 이러한 양상은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

## 제 2 절 대학입학예비고사와 대학입학자격의 국가 관리(1961~1980년)

### 1) 대학입학자격 국가고시와 대학입학예비고사 실시

'5·16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은 1961년 8월 12일, 교육 쇄신 방안의 일환으로 '중학교고등학교및대학의입학에관한임시조치법'과 그 시행 세칙을 공포하였다. 그 내용은 대학별로 실시하던 선발 고사를 폐지하고, 1962학년도부터 대학입학자격 국가고시를 실시한다는 것이었다. 박정희 정권이 내세운 새 제도의 도입 목적은 부정 입학과 무능력자의 대학 입학을 막고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적격자를 선발함으로써, 대



학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는 것이었다. 실제 해방 이후, 특히 한국전쟁 뒤 대학 입시 관련 부정과 비리가 만연하여 대학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극심한 상황이었다(박정희 정권의 대학 정비 시책에 대해서는 제3부 제2장 2절 참조).

대학입학자격 국가고시의 시험 과목은 국어(1), 사회(일반사회, 도덕, 국사), 수학(1), 과학(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실업·가정(농업, 공업, 상업, 수산업, 가정 중 택일) 과 영어 등 필수 6과목과 선택 1과목이었다. 서울대학교 1962학년도 입학시험도 이 조치법 및 시행 세칙에 의해 실시하여 자체 필기시험은 치르지 않고, 대학입학자격 국가고시의 성적과 체능 검사, 신체검사 및 면접시험 성적만으로 전형을 실시하였다.

대학입학자격 국가고시는 본래 대학 입학의 '자격' 유무를 판정하는 고시를 표방하였으나, 실제로는 정부가 '선발' 고시 기능까지 하도록 강요하였다. 그리하여 대학 자율권을 크게 침해하였다는 비판에 직면하였다. 또 이른바 일류 대학에 지원자가 집중하면서 정원이 미달되는 대학이 발생했는데, 당국은 이들 대학을 위해 추가 합격자를 발표함으로써 국가 고시의 신뢰성을 스스로 떨어뜨렸다. 국민 체위를 향상시킨다는 취지에서 도입한 체능 검사가 총점 350점 중의 50점으로 과대하게 책정된 것도 문제였다. 뿐만 아니라 실업계 교육을 육성한다는 목적에서 실업계 학교 졸업 예정자들은 서류 전형만으로 동일계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역시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각계의 반대 여론이 비등하자, 문교부는 1962년 3월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 새 입시 제도를 연구 검토할 것을 위촉하였고, 사범대학은 현행 대학입학자격 국가고시를 반대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제출하였다. 이에 문교부는 대학입학자격 국가고시의 부정적 측면을 인정하고, 앞으로 대학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또 1963년 도부터는 국가고시를 문자 그대로 '자격 고시' 로만 활용하도록 결정하였다.

그 결과 서울대학교는 1963학년도 입시에서 자체 필답 고사로 필수 과목 4과목과 선택 과목 1과목을 시행할 수 있었다. 또 체능 검사 성적은 전체 성적의 1/8만 반영하였고, 음악대학, 미술대학, 사범대학 체육교육과는 실기 고사를 실시하였다. 학과 지망은 동일 대학에 한해 제2지망까지 지원할 수 있었으며, 공과대학, 농과대학, 상과대학은 동일계 실업학교 또는 일반 고등학교의 해당 학과 출신자를 모집 정원의 20%까지 뽑을 수 있었다.

하지만 대폭적인 수정을 거친 후에도 여전히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자, 결국 대학입학자격 국가고시는 시행 2년 만에 폐지되었다. 그리고 입학시험 제도는 1964학년도부터

예전대로 환원되었다. 그렇지만 서울대학교의 입시 제도는 여전히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입학시험 사정이 학과 중심으로 이루어져, 수험생들을 동일한 기준에서 사정하여 선발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둘째, 선택 과목이 너무 많아 각 과목 간 난이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다. 셋째, 입시를 위한 학습에 종합성이 결여되어 있었다.

서울대학교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첫 번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학과가 아닌 대학 또는 대학 내 동일 계열 중심으로 신입생을 선발한 다음, 대학에서 교양 과정을 공동으로 이수한 성적을 기준으로 학과 선택의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법이 제기되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택 과목을 사회계와 자연계로 통합하고 각 계열 내에서 여러 과목들을 합리적인 비율로 배합하는 방안, 또는 선택 과목의 난이도 차이에 따른 불균등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한 채점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 등이 제기되었다. 그 일환으로 1967학년도 입시부터 선택 과목의 취득 점수를 표준화하는 작업이 거론되었으며, 그해 3월에 열린 입시제도합리화방안연구준비회는 선택 과목을 하나로 합하여 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1967년 9월, 서울대학교 교무처는 영역별 학생 선발과 전 과목 출제를 골자로 하는 획기적인 입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방안은 입학시험을 1차와 2차로 나누어 시행하되, 1차 시험은 대학 생활을 위한 적성을 검사하는 대학 적성 검사와 고등학교 교육 과정 전반에 대해 평가하는 종합 학력 고사를 영역별로 실시하여 정원의 2배 정도를 선발한 다음, 2차 시험에서 학과별 정원을 선발한다는 구상이었다. 이때 영역이란 각 학과를 인문·사회 과학 분야, 이공·농학 분야, 의·약학 분야 및 예술·체육 분야로 구분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2차 시험에는 각 대학 또는 학과에서 부과하는 필수 과목 고사와 논문 시험, 면접시험, 신체검사 등이 포함되었다.

이 방안은 목적과 취지는 훌륭했으나, 시행을 위해서는 보다 면밀한 연구와 함께 다른 대학들의 공동보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특히 영역별 학생 선발은 문교부 차원에서 입시 제도 전반을 개혁하지 않고서는 실현하기 어려운 사안이었다. 따라서 이 방안은 백지화될 수밖에 없었다.

대학입학자격 국가고시가 폐지되고 대학별 단독 고사가 실시되는 동안, 일부 대학에서 대학 정원 초과 모집, 부정 입학 등 문제가 계속 발생하였다. 이에 또 다시 대학 입시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1968년 10월, 문교부는 대학생의 자질 향상 문제와 일부 대학에서 있었던 정원 초과

모집, 공납금 유용 등의 누적된 폐단을 시정하려는 목적으로 ‘대학 입학 예비 고사제’ 실시를 발표하였다. 이는 고질화된 일부 사립대학의 비리를 학사 감사(學事監査), 교육법 개정 등 소극적 방법으로 규제하려는 노력이 실패로 돌아가자, 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모색한 것이었다. 즉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격시험으로 예비 고사를 거치게 하여 합격자에게만 입학 지원 자격을 부여하면, 과잉된 대학 교육열을 해소하고 대학 운영의 폐단을 시정하는 것은 물론, 대학생의 질적 향상도 꾀할 수 있으리란 생각이었다. 이는 명칭만 조금 바뀌었을 뿐 그 취지나 시행 방식은 사실상 이전의 대학 입학 자격 국가고시제와 같은 것이었다. 1968년 11월, 대통령령으로 ‘대학 입학예비고사령’이 공포됨으로써, 1969학년도 입시부터 미술대학과 음악대학의 7개 학과와 사범대학 체육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의 지망자는 예비 고사를 거쳐야 했다.

예비 고사는 선택형 필기 고사였으며, 거의 전과목에 걸쳐 시행되었다. 합격자는 고사 교과목 총성적의 다득점 순으로 결정되었고, 합격자 수는 적어도 ‘대학학생정원령’에 의한 입학 정원(예체능계 입학 정원은 제외) 이상으로 하였다.

1970학년도부터는 서울대학교 본고사에서 전 과목 출제가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이는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적인 발전과 합리적인 학력 평가를 위해 오랫동안 추진한 것이었다. 문과계는 국어1·2, 수학1, 영어, 사회A(일반사회, 국민 윤리, 정치, 경제, 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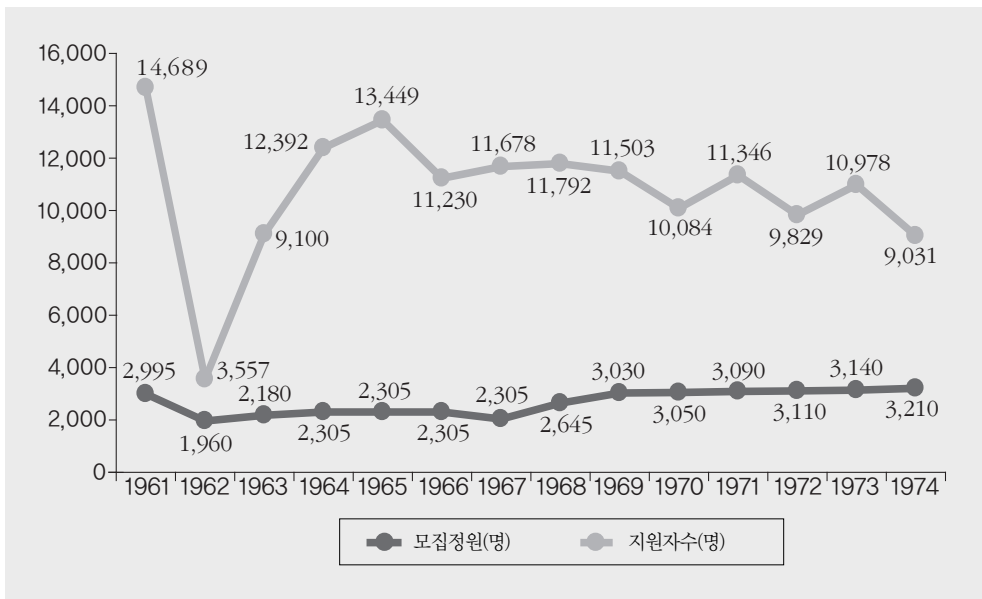


그림 3-1-4 학사 과정 모집 정원과 지원자 추이 (1961~1974년)

세계사, 지리1·2)를, 이과계는 국어1, 수학2, 영어, 사회B(사회 A에서 정치, 경제 제외)와 과학B(물리2, 화학2, 생물1·2, 지학)를 필수 과목으로 하였으며, 제2 외국어를 필수 선택으로 부과하였다. 단, 미술대학과 음악대학은 제2 외국어를 부과하지 않았으며, 필수 과목도 국어1과, 영어, 사회B에 국한하였다. 각 과목 배점은 필수 과목이 각각 100점씩이었고 선택 과목이 50점이었는데, 1971학년도부터 필수 과목 중 사회A와 과학B가 30점씩 늘어 각각 130점으로 바뀌었다.

한편 서울대학교 입시 경쟁률은 국가 시책의 변화 등에 따라 조금씩 달라졌는데, 그 추세를 살펴보면 <그림 3-1-4>와 같다.

1961~1968학년도 입시 경쟁률은 주로 약 5:1의 경쟁률을 보였는데, 1962학년도에 유독 1.8:1로 급격히 떨어진 것은 대학입학자격 국가고시 시행으로 지원 자격이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1969~1974학년도에도 약 3.5:1로 내려갔는데, 이 역시 1969학년도부터 대학입학예비고사가 실시되어 지원자가 감소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봤을 때, 과잉된 대학 교육열 해소라는 대학입학예비고사의 도입 취지는 어느 정도 달성한 셈이었다.

## 2) 대학입학예비고사 개정과 의무 반영 비율의 확대

대학입학예비고사령은 1973학년도에 대폭 개정되었다. 대학입학예비고사를 시·도 단위로 사정하고, 합격자는 예비 고사를 치른 시·도 내 대학에만 진학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학 입시에서 예비 고사 성적을 20% 이상, 체력 검사 성적을 1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반영토록 한 것이다. 예비 고사에 응시하는 자는 자기가 진학할 대학이 있는 시·도를 명기해야 했으며, 합격하였더라도 다른 시·도의 대학에 지원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서울대학교 지원 자격도 당해 연도 서울 지역 예비 고사에 합격한 자로 제한되었다. 예비 고사를 치르지 않던 예체능계 지원자도 별도로 예비 고사를 치르게 되었는데, 일반 예비 고사 응시자와 분리하여 사정하였다.

예비 고사 성적을 각 대학의 입학시험 성적에 반영한다는 문교부의 발표가 있을 후, 서울대학교에서는 이를 진지하게 검토하였다. 그리고 학장회 결정과 문교부의 승인을 거쳐 예비 고사 성적의 10%를 필답 고사 성적에 가산하기로 하였다. 이후 예비 고사 성적의 반영 비율은 매년 증가하여, 1975년에는 20%, 1976년에는 30%를, 1979년에는

100%를 가산하기에 이르렀다.

이 시기 대학 입학에 대한 문교부의 기본 방침은 예비 고사 반영 비율을 높이고 본고사 과목 수를 축소·폐지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전국 각 대학에 ① 예비 고사 성적 반영률 증가, ② 고등학교 성적의 반영 방법 개선, ③ 예비 고사 성적과 고등학교 성적이 의한 전형 방법 연구, ④ 출제 내용 및 출제 방법 개선, ⑤ 적성 검사와 면접의 실시 및 반영 등 5개 항목을 권장 사항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입학시험 형태로 ① 예비 고사 성적, ② 예비 고사 성적+고등학교 성적, ③ 예비 고사 성적+고등학교 성적+필기 고사 실시, ④ 예비 고사 성적+필기 고사 중 한 형태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림 3-1-5 1973학년도 기계설계학과 입학시험 광경

이런 방침에 따라 서울대학교는 수년간 예비 고사와 본고사의 상관관계를 조사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본고사 필답 고사 과목의 축소와 예비 고사 반영 비율 증가를 입시 제도에 반영해 나갔다. 그 상황을 1980학년도까지 살펴보면 <표 3-1-2>와 같다.

1977학년도에 시험 과목 수가 6과목에서 4과목으로 줄어든 것은 제2 외국어가 제외되고, 문과에서는 과학, 이과에서는 사회가 각각 입시 과목에서 빠졌으며, 예체능계는

<표 3-1-2> 입학 고사 과목 배점 상황(1974~1980년)

구분 학년도	본고사		예비 고사		내신 성적	총점
	과목 수	배점	반영 비율(%)	배점		
1974	6	580	10	34	-	612
1975	6	580	20	68	-	648
1976	6	580	30	102	-	682
1977	4	430	40	136	-	566
1978	4	430	40	136	-	566
1979	3	300	100	340	10	650
1980	3	300	100	340	10	684

비고: 1980학년도 예비 고사 반영 비율은 자연계에 한하여 동일계 지원자일 경우 10% 가산.

사회 또는 과학 과목 대신 실기 고사를 치르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1976학년도부터 제2 외국어에 스페인어와 함께 일본어가 추가되었다. 이는 일본어가 1973년부터 고등학교 과정에서 제2 외국어로 채택된 이래, 300여 개 학교의 15만 명(1975년 현재 3학년은 4만 명)이 공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문교부가 제2 외국어로 추가할 것을 중용한 결과였다. 서울대학교는 이에 대해 일본어 전공학과가 없고 행정 준비 기간이 필요하므로, 제2 외국어 자체를 입시 과목에서 제외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추가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지만 끝내 문교부의 요구가 관철되었다. 단지 스페인어가 함께 추가된 것이 문교부의 요구와는 다른 것이었다. 그러다 1년 만에 제2 외국어 자체가 입시 과목에서 제외된 것이었다. 이와 같은 변화는 1977년 신입생이 서울과 부산 지역에서 고교 평준화에 의해 추첨으로 고교에 입학한 첫 학생들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1979학년도에는 오랫동안의 분석과 검토의 결과, 예비 고사 성적 340점을 그대로 반영하고 필답 고사는 국어·영어·수학 3과목만 치르도록 하며, 1980년부터 국·공립대학에서 의무화하기로 한 고교 내신 성적의 반영을 1년 앞당겨 실시하도록 되었다. 이에 예체능계는 필답 고사 과목을 없애고 실기 고사만 치르도록 조정되었다.

한편 1980년 4월에 설치된 입시제도개선위원회는 필답 고사 과목과 예비 고사 성적 반영율은 그대로 두고, 고등학교 내신 성적을 1981년에 20점, 1982년에 30점, 1983년과 1984년에 50점, 1985년에 50~100점을 반영시키도록 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이 제안의 기본 방향은 종전의 방침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것이었는데, 1980년의 '7·30 교육개혁조치'로 인해 실시하지도 못한 채 폐기되었다.

1960년대 초부터 박정희 정권은 부정입학 근절을 이유로 대학 입시에 적극 관여하기 시작했고, 이는 1969학년도 이래 대학입학 예비고사로 정착되었다. 대학입학 예비고사는 당초 입학자격 관리를 위한 시험으로 출발했으나 1970년대 들어 점점 그 반영 비율이 확대되었고, 그만큼 본고사의 비중은 낮아졌다. 그리고 1980년, 신군부의 등장과 함께 본고사는 아예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 3) 군 위탁 학사 편입생과 모국 유학생 교육

#### (1) 편입학 제도와 군 위탁생 교육 체계화

1960~1970년대 서울대학교의 학사 편입 제도는 정원에 여석이 있는 학과에 한하여

학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해당 대학별로 엄격하게 편입 사정을 하였으며, 합격자는 출신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 성적 중 편입 학점으로 인정된 학점 수에 따라 2, 3학년에 편입하였다. 1970학년도 학사 편입 원칙은 다음과 같았다.

1. 3학년 편입학의 경우: 1968학년도 입학 정원에서 학적 보유 학생 수(1969학년도 제2학기 등록생 및 휴학생)를 공제한 수로 하되 80학점 이상의 학점을 인정받은 자에 한한다.
2. 2학년 편입학의 경우: 1969학년도 입학 정원에서 학적 보유 학생 수(전입 포함)를 공제한 수 및 전학, 전과로 인한 결원 수로 하되 40학점 이상의 학점을 인정받은 자에 한한다.
3. 상기 여석 수는 학과 단위로 산출한다. 단 각 대학별 1968, 1969학년도 입학 정원의 총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

연도별 각 단과대학별 학사 편입 상황은 <표 3-1-3>과 같다.

<표 3-1-3> 연도별 학사 편입 상황(1961~1976년)

(단위: 명)

연도 단과대학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공과대학	5	7	2	10	8	18	4	19	22	6	3	1	2	-	-	1
농과대학	2	-	-	-	3	3	-	2	1	1	-	-	1	-	-	-
문리과대학	41	18	11	11	21	9	10	26	15	5	26	10	6	7	-	-
법과대학	8	4	6	3	2	-	3	7	4	1	6	5	-	2	4	7
사범대학	9	1	1	-	-	-	-	4	-	1	1	8	4	3	1	4
상과대학	1	2	4	4	4	8	4	13	10	-	1	5	1	4	-	-
음악대학	-	-	-	2	-	4	-	1	1	-	-	-	-	-	-	1
약학대학	-	2	-	-	-	-	1	1	1	1	-	-	-	-	-	-
치과대학	-	1	-	-	-	-	-	-	-	-	-	-	-	-	-	-
미술대학	-	-	-	-	-	-	-	-	-	-	-	-	-	-	-	1
의과대학	-	-	-	-	-	-	-	-	-	-	-	-	-	-	-	-
인문대학	-	-	-	-	-	-	-	-	-	-	-	-	-	-	2	2
사회대학	-	-	-	-	-	-	-	-	-	-	-	-	-	-	3	13
자연대학	-	-	-	-	-	-	-	-	-	-	-	-	-	-	4	-
경영대학	-	-	-	-	-	-	-	-	-	-	-	-	-	-	3	10
합 계	70	35	20	35	38	42	21	73	54	15	37	30	14	16	17	39

출전: 서울대학교 40년사 편찬위원회, 1986 『서울대학교 40년사』, 210쪽.

〈표 3-1-4〉 연도별 군 위탁생 취학 상황(1961~1975년)

(단위: 명)

구분	연도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취학 허가자 수		37	29	48	49	34	27	-	-	37	48	14	35	25	36
재학 생 수	대학	52	62	69	78	60	52	45	60	64	72	76	58	81	86	80
	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49	-	-	43	40	12	81	66	59	76	96	80	74	76	1

출전: 서울대학교 40년사 편찬위원회, 1986 『서울대학교 40년사』, 210쪽.

한편 정부 각 기관 위탁생이 서울대학교에 취학하였는데, 특히 군 위탁 학사 편입생 수가 매년 상당하였다. 1964년 2월, 서울대학교 교무과는 군 위탁생 학사 편입 처리의 기본 방향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1. 대학원 및 행정대학원 위탁자에 대하여는 일반 응시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며 불합격자는 연구생으로 취학시킨다.
2. 대학 위탁자 중 학사학위 소지자에 대하여는 각 대학 교수회의 의결에 따라 전형에 의해 학사 편입 또는 위탁생으로 취학케 한다.
3. 학사학위를 소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전원 위탁생으로 처리한다.

그후 1965년 3월에 학장회는 현역 군인 위탁 교육을 위탁생과 학사 편입 두 종류로 나누어 구별하였다. 그중 학사 편입은 3군 사관학교 출신자로 졸업 후 반드시 교수 요원이 될 자에 한하여 허가하였으며, 여타 위탁생은 원칙적으로 과목 청강만 할 수 있었다. 전공과목 및 어학 과목 시험을 치러서 평균 60점 이상을 얻어야 입학할 수 있었다. 연도별 군 위탁생 취학 상황은 〈표 3-1-4〉와 같다.

## (2) 모국 유학생 교육

1963년부터 서울대학교에는 문교부의 모국 유학(母國留學) 강화 계획에 따라 매년 재일 교포 학생들이 취학하였다. 서울대학교는 문교부의 지침에 따라 정원에 구애받지 않고 이들의 입학은 모두 허가하였다. 이 제도는 재일 교포 학생들이 모국에서 대학 과정을 밟음으로써, 일본에서 익힌 왜곡된 대 한국관(對韓國觀)을 시정하고 민족 정신과 반공 정신을 함양하도록 하기 위해 시행하였다.

입학 전형은 교과 과정을 이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국어를 중시하였으며, 주일대사



관에서 실시한 시험 성적을 토대로 각 대학 및 학과에서 서류 전형만으로 입학을 허가하였다. 또한 대학원 지망자에게는 최대한 특혜를 부여하였는데, 수업 일수에 지장이 없는 기한 내에서 대학원장 신청에 의해 3월 말 이후에도 입학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교포 학생들의 학업 성적이 대체로 부진하여 큰 문제였다. 그 이유는 한국어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했고, 일본과 한국의 교과 과정 차이, 생활 불안정 등 때문이기도 했다. 교포 학생들 상당수가 1년 간의 예비 교육 과정 도중에 학업을 포기하였으며, 대학 입학 뒤에도 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중도 탈락자가 속출하였다. 결국 반수 이상의 학생이 졸업을 못하고 일본으로 돌아가는 지경에 이르렀다.

시행 초기 재일 교포 유학생 수는 그리 많지 않았는데, 당시 '5·16 쿠데타'의 여파로 사회 정세가 불안하고 모국에 대한 교포들 인식도 상당히 낮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점차 사회 질서가 정비되고 교포들 인식도 바뀜에 따라 유학생 수도 늘어났다. 특히 1966년 한 일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진 후로 상당히 증가하였다. 연도별 교포 학생 입학 수와 졸업생 수는 <표 3-1-5>와 같다.

그런데 박정희와 김대중 간의 치열한 대통령 선거를 일주일 앞둔 1971년 4월 20일, 육군보안사령부는 '재일교포학생학원침투간첩단사건'을 대대적으로 발표하였다. 일본 교토(京都) 출신으로 당시 본교 법과대학과 대학원 사회학과에 각각 재학 중이던 서준식, 서승 형제도 간첩으로 몰려 이후 20여 년에 가까운 세월을 복역하였다. 20세기 말의 대표적 인권 탄압 사례로 꼽히는 이 사건은 박정희 정권이 재일 교포 학생들의 모국 유학을 얼마나 정치적으로 이용하였는지 잘 보여준다.

한편 1970년 6월, 서울대학교 설치령을 개정으로 재외국민교육연구소가 신설되었다. 이 연구소는 교포 학생에 대한 예비 교육을 담당하는 예비교육부와 장학 학생 지도 및 후생을 담당하는 학생지도부로 구성되어 교포 교육 정상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재외국

<표 3-1-5> 연도별 재일교포학생 취학 상황

(단위: 명)

구분	연도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66	계
		입학생	대학	5	6	1	6	9	27	14	17	28	22	18	13	15
	대학원	-	-	1	-	1	3	3	7	7	2	2	5	4	7	42
졸업생	대학	-	-	2	1	5	3	-	5	4	6	11	10	13	-	60
	대학원	-	-	-	-	-	1	1	-	1	1	1	1	1	-	7

출전: 서울대학교 40년사 편찬위원회, 1986 『서울대학교 40년사』, 208쪽.

민교육연구소는 1977년 3월 재외국민교육원으로 개편되었다가, 1992년 3월 국제진흥원이 설립되면서 서울대학교에서 분리·독립하였다.

#### 4) 대학원 입시제도 정비

서울대학교는 1968년 ‘서울대학교 종합10개년계획’을 수립하면서 본격적으로 종합화를 추진하였고, 종합화의 궁극적 지향으로 대학원 중심 대학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1971년 2월 대학원 교육 강화에 관한 기초 연구를 위해 대학원전문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전문위원회는 대학원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두 차례에 걸쳐 제출하였다. 보고서는 일본식 도제 교육과 같은 현 대학원 제도를 미국식 개방형으로 바꿀 것을 제안하면서 클래스 단위의 수업이 가능할 정도로 대학원 정원을 늘릴 것을 요구하였다.

문교부는 이를 받아들여 1973학년도부터 대학원 정원을 대폭 증가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그 결과 1964년 245명, 1968년 287명, 1971년 425명이던 서울대학교의 석사과정 입학 정원은 1973년 704명, 1974년 714명, 1976년 1,030명으로 급격히 팽창하였다. 종전에는 대학원 정원을 대학 총정원의 1/10 이내로 제한하였는데, 문교부의 방침에 따라 학칙을 개정하여 이를 1/5로 했기 때문이었다.



그림 3-1-6 대학원 입학 정원 변화(1968~1980년)(출전: 『통계연보』, 비교: 전문 대학원 제외)

서울대학교의 대학원 입시 제도에 변화가 온 것은 1977학년도 입시였다. 그때까지 모든 계열의 입시 과목으로 전공·영어·제2 외국어를 획일적으로 부과하고 각 과목에 같은 점수를 배당하였는데, 이로 인해 신입생 선발에서 전공보다 외국어 성적의 영향이 더 큰 모순이 있었다. 1977학년도 입시부터 이를 개선하여 인문·사회계만 제2 외국어 시험을 보고, 그 외 계열은 영어만 보는 것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배점도 전공 200점, 영어 100점, 제2 외국어 50점으로 하여 전공과목의 영향을 늘렸다. 제2 외국어 종류도 종래의 독어·불어 2과목에 한문·중국어를 추가하였다.

이와 함께 1977학년도부터 대학원 입학 자격 제한을 폐지하였다. 전에는 대학원 각 학과에 지원 가능한 출신 학과를 제시하였는데, 이해에 이르러 석사과정은 출신 학과 제한을 모두 폐지하고 단지 박사과정만 동종 계통의 학과 또는 전공 과정이라는 제한을 두었다.

입학시험 시기도 종전에는 연 2회의 입학시험을 치렀으나, 1976학년도부터 연 1회 2월에만 실시하고, 1978학년도부터는 다시 12월로 입학시험 일자를 앞당겼다. 대학원 입시를 조기 실시한 것은 우수한 인재의 유출을 막고, 국가고시 및 군의관 임관과 대학원 입시의 중복으로 인한 대학원 진학자의 부담을 덜어 주며, 대학 입시와의 중복을 피하여 입시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였다.

한편 종합화 이전에는 대학원이 독립된 행정 기구였기 때문에 입시 관리가 가능하였으나, 종합화 이후에는 일반 대학원과 전문 대학원이 공동 입시 관리 하에 있어서 대학원이 조직적인 입시 관리를 할 수 없었다. 이런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1976학년도부터 각 대학 및 전문 대학원의 실무진으로 구성된 입시관리위원회(위원장: 교무처장)를 설치하여 입시와 관련한 제반 업무를 관리하였다.

### 제 3 절 대입 본고사 폐지와 모집 정원 급증(1980~1994년)

#### 1) ‘7·30 교육개혁조치’와 대입 본고사 폐지

학원 자율성을 엄격히 제한했던 유신체제가 1979년 ‘10·26 사태’로 막을 내리자, 서울대학교 대학본부, 교수, 학생 등은 대학 자율화를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그중 입시

제도의 자율화 차원에서는 1980년 4월 입시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사범대학 정원식 교수)를 조직하였고, 위원회는 그해 6월 9일에 ‘종합입시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안은 전형 방법의 변화가 가져올 심리적, 교육적 영향을 고려하여 급격한 변화를 피하고 점진적인 개선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우선 1981학년도 입시에서 그때까지 부분 사지선다형이던 본고사를 전면 주관식 서술형으로 바꾸고, 내신 성적이 총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1.5%에서 3%로 높이기로 하였다. 그리고 1982학년도부터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던 면접 성적을 총점에 반영하고, 1985학년도까지 고교 내신 성적과 면접 성적의 반영 비율을 연차적으로 높이기로 하였다. 최종적으로는 교외에서 평가하는 예비 고사 성적과 내신 성적을 합한 것이 교내에서 평가하는 본고사와 면접 성적을 합한 것과 같게 만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1980년 5월 17일, 쿠데타로 신군부가 정치 권력을 장악하면서 그간 서울대학교에서 논의하였던 학원 자율화 시도는 모두 물거품이 되었다. 신군부는 먼저 7월 25일, 대학 내 시위를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수업의 충실화와 학내 질서의 확립’을 내용으로 하는 ‘대학학사운영정상화방안’을 각 대학에 시달하였다. 그리고 대학이 아직 휴교 중이던 1980년 7월 30일, 전두환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교육정상화 및 과열과외해소방안’을 발표하여 대대적인 교육 개혁 조치를 단행하였다. 이것이 소위 7·30 교육개혁조치로, 그 가운데 대학 입시와 관련해서는 아래와 같이 대입 본고사 폐지와 졸업 정원제 시행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 1981학년도부터 대학 입시 본고사를 폐지하고, 출신 고등학교의 내신 성적과 예비 고사 성적만으로 대학 입학자를 선발한다.
- 대학의 졸업 정원제를 실시하여 신입생을 정원 수보다 더 입학시키며, 졸업은 정원 수만큼만 시킨다.
- 대학 진학의 문호를 넓히기 위해 대학 입학 인원을 연차적으로 대폭 확대한다.

사실 예비 고사 반영 비율을 높이고 본고사를 축소·폐지하는 것은, 일찍이 정부가 1974년부터 기본 방침으로 각 대학에 권장하여 온 것인데 신군부는 이를 보다 철저하고 급속하게 시행하였다. 당시 대학 본고사는 대개 주관식 비중이 높고 상대적으로 어렵게 출제되어 수험생들 사이에서 이를 대비하는 과외가 성행하였다. 이 때문에 대학 본고사가 고등학교 교육의 비정상화를 초래하고, 빈부 격차로 인한 위화감 조성에 결정적 역

〈표 3-1-6〉 1981학년도 입시 전형 요소와 반영 비율

## 〈인문·자연계〉

대학	예비 고사 성적		고교 내신 성적		총점
	만점	반영 비율(%)	만점	반영 비율(%)	
인문계 대학	340	77.3	100	22.7	440
자연계 대학	370	78.7	100	21.3	470

## 〈예·체능계〉

대학	예비 고사 성적		고교 내신 성적		실기 고사 성적		총점
	만점	반영 비율(%)	만점	반영 비율(%)	만점	반영 비율(%)	
미술대학 전학과	340	40.5	200	23.8	300	35.7	840
음악대학 전학과	170	27.4	150	24.2	300	48.4	620
사범대학	340	49.3	150	21.7	200	29.0	690
체육교육과	*370	51.4	150	20.8	200	27.8	720

비고: \*표는 예비 고사 자연계 합격자가 체육교육과를 지원할 경우.

할을 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하지만 정부의 본고사 폐지 조치는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성을 제한하고, 선발 방식을 획일화한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웠다.

정부는 7·30 교육개혁조치를 바탕으로 1981학년도 입시에서 예비 고사 성적을 50% 이상, 고교 내신 성적을 20% 이상 반영하도록 하였다. 전형 절차는 학생들에게 예비 고사 성적을 모두 알려 준 후 각자 지망 대학에 입학 원서를 제출케 하는 이른바 선시험-후지원 방식으로 하였으며, 학생들의 대학 선택 폭을 넓히고 우수 학생의 재수 현상을 방지한다는 목적에서 전·후기로 나누어 여러 대학에 복수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형 일자가 같은 대학이라도 복수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각 대학에서 실시하는 면접은 점수화하지 않고, 합격 불합격의 판정 자료로만 활용하도록 했으며, 졸업 정원제 실시에 따라 전체 정원의 30%를 추가 모집하도록 하였다.

새롭게 바뀐 정부의 지침에 따라 1981학년도 서울대학교 입시도 예비 고사 성적과 고교 내신 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인문계는 예비 고사 성적 340점과 고교 내신 성적 100점을 합하여 440점을 만점으로 하였고, 자연계는 예비 고사 성적 370점(자연계 동일계 지원 시 30점 가산 포함)과 고교 내신 성적 100점을

합하여 470점을 만점으로 하였다. 그리고 미술대학을 예비 고사 340점, 고교 내신 성적 200점, 실기 점수 300점, 음악대학은 예비 고사 170점에 고교 내신 성적 150점, 실기 고사 300점을 반영하였다.

기대와 우려 속에 1981학년도 입시를 시행한 결과, 사상 초유의 미달 사태가 발생하고 원서 접수 시 극심한 눈치 작전이 벌어지는 등 새 입시 제도는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이는 졸업 정원제로 모집 정원이 확대되고, 선시험-후지원 제도로 눈치 작전이 심화되었기 때문이었다. 총 모집 정원 6,530명에 11,848명이 지원하여 평균 1.8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는데, 이는 1979학년도 2.58 대 1, 1980학년도 2.8 대 1보다 훨씬 낮았다. 최종 합격자는 5,292명으로 1,238명이 미달되어 6개 대학만이 정원을 채웠고, 9개 대학은 졸업 정원에도 미달되었으며, 졸업 정원 5,020명을 겨우 272명 상회하는 형편이었다. 모집 정원 미달 사태로 예비 고사 저득점자가 상당수 합격하였고, 200점 이하 합격자도 100여 명에 달하였다. 또 합격 여부에만 관심을 두면서 본인 희망과 다른 전공 학과에 입학한 학생도 많았다.

1982학년도 대학 입시 제도는 전년에 비해 몇 가지가 달라졌다.

첫째, 대학입학예비고사가 대학입학학력고사로 명칭이 바뀌었다. 대학입학예비고사는 당초 자격 고사로 출발하였으나 그 성적이 입시 전형에 활용됨으로써, 더 이상 예비고사라는 이름이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둘째, 정부가 내신 성적 반영 비율을 30% 이상으로 높이도록 하였는데, 이후 서울대학교 입시에서 내신 성적 반영 비율은 1990년대 초까지 줄곧 30% 내외를 유지하였다(1987학년도만 40~44.8% 반영). 그런데 내신 성적의 형식적인 반영 비율은 30%로 꽤 높았지만 실질적인 반영 비율은 이보다 크게 낮은 것이 보통이었다. 내신 성적은 교과 성적과 출석 성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교과 성적의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 차이는 불과 18점이었고, 출석 점수의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 차도 6점에 불과했다. 고등학교 내신 성적은 지역 간·학교 간에 존재하는 현실적 학력 차이를 무시하고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를 동일 수준으로 취급하여 고교 성적을 동급화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내신 성적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고교 교육의 정상화를 유도하면서도, 실제 존재하는 지역 간·학교 간 학력차를 무시할 수 없었으므로 이렇듯 내신 성적의 영향을 가급적 적게 할 수밖에 없었다.

셋째, 지원자들이 3차 지망까지 가능하게 되었다. 그래서 모집 인원의 70%를 제1지망자 중에서 선발하고, 나머지 30%는 제1지망에서 탈락한 자와 제2지망자를 합쳐 성적

〈표 3-1-7〉 1981학년도 대학별 정원 및 합격자 현황

(단위: 명)

	졸업 정원	모집 인원	합격자	미달
인문대학	520	676	507	169(13)
사회과학대학	565	735	625	110
자연과학대학	420	546	438	108
의예과	200	260	237	23
치의예과	120	156	92	64(28)
가정대학	100	130	89	41(11)
가정관리	50	65	47	18(3)
경영대학	250	325	214	111(36)
공과대학	795	1,034	904	130
농과대학	500	650	474	176(26)
농경제학과	40	52	44	8
농가정학과	40	52	37	15(3)
농업교육	50	65	64	1
미술대학 회화	50	66	66	0
조소	30	40	37	3
응용미술	60	78	73	5
법과대학	280	364	344	20
사범대학 인문·사회	230	299	233	66
국민 윤리	40	52	52	0
자연계	200	260	142	118(58)
체육과	70	91	91	0
수의과대학	60	78	78	0
약학대학	80	104	69	35(11)
음악대학 성악	40	52	52	0
작곡	25	33	32	1
기악	95	124	111	13
국악	30	39	36	3
간호학과	80	104	104	0
합계	5,020	6,530	5,292	1,238

출전: 서울대학교40년사편찬위원회, 1986 『서울대학교 40년사』, 503쪽.

비고: ( )는 졸업 정원 미달.

순으로 선발하였다. 제1·2지망 합격자가 모집 인원에 미달할 경우 제3지망자 중에서 성적순으로 충당하였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모집 방법을 대학 자율로 일임하자, 서울대학교는 1982학년도 입시에서 모집 단위에 변화를 주어 계열별 모집의 문제점을 완화하려 하였다. 즉, 계열을 대폭 세분화하고 일부 비인기 학과는 학과 모집을 실시하였다. 예를 들어 전해에 단일 단위로 모집했던 사회과학대학은 사회Ⅰ(정치학과, 외교학과), 사회Ⅱ(경제학과, 무역학과), 사회Ⅲ(사회학과, 인류학과, 신문학과), 심리학과, 지리학과, 사회복지학과로 나누어 모집하였다. 다음해 1983학년도에는 과별로 모집하는 곳이 더욱 늘었고, 결국 1984학년도에는 전 단과대학이 이전의 과별 모집 체제로 완전히 환원하였다(계열별 모집에 대해서는 제3부 제2장 3절 참조).

1984학년도 입시부터는 시행 첫해부터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였던 졸업 정원제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이해 입시는 이전 졸업 정원의 130%를 모집하던 것에서 의예과와 치의예과가 105%, 가정대학과 간호학과가 110%로 모집 인원을 줄였다. 그리고 다음해 1985학년도에 108%, 1986학년도에 107%, 1987학년도에 105%로 줄였다가, 1988학년도부터 졸업 정원이 곧 입학 정원이 되는 이전의 제도로 완전히 복귀하였다.

또 1984학년도 입시부터 1974학년도부터 실시한 동일계 특별 전형 중 실업계 특별 전형 제도를 폐지하였다. 실업계 특별 전형은 농업계, 공업계, 상업계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로서, 성적이 상위 3할 이내에 해당하는 자가 출신 학교장의 추천을 얻어 서울대학교의 같은 계열 해당 학과에 지원하면 일정 수 인원을 학력고사 성적(340점 만점)과 고교 내신 성적(166점 만점)에 의거하여 전형하는 방식이었다. 시행 마지막 해인 1983학년도의 실업계 특별 전형 인원을 보면, 경영대학에서 16명, 공과대학에서 39명, 농과대학에서 32명, 사범대학 체육교육과에서 9명을 모집하였다.

이에 비해 체육 고등학교 출신자 특별 전형은 1991학년도 입시부터 폐지되었다. 체육 고등학교 출신자 특별 전형은 체육 고등학교 출신자로서 대학입학학력고사를 거친 자가 출신 학교장의 추천에 의해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에 진학할 경우 일정 인원을 학력고사 성적(340점 만점), 고교 내신 성적(280점 만점) 및 실기 고사 성적(300점 만점)을 가지고 전형하였다. 1990학년도의 경우 선발 인원은 6명 이내였다.

## 2) 졸업 정원제 실시와 모집 정원 급증

1980년 신군부가 발표한 7·30 교육개혁조치 중 무엇보다 대학 학사 운영을 송두리



째 변화시킨 것은 졸업 정원제 실시였다. 졸업 정원제란 일정 인원의 졸업 정원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의 학생을 초과 모집하여 성적이 나쁜 순으로 초과 모집된 학생들을 매년 유급 탈락시키는 제도였다. 신군부는 졸업 정원제와 함께 대학 진학의 문호를 넓힌다는 명분 하에 대학 입학 인원을 연차적으로 대폭 확대할 것도 제시하였다.

졸업 정원제 시행의 표면적 명분은 대학 교육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것이었다. 대학 입학의 문호를 넓히되 대학 졸업의 관문을 좁히면, 학생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졸업에 집중하게 될 것이고, 학업에 열중하면 학력이 향상될 것이라는 식이었다. 또 과열된 고교생의 과외 학습을 해소시키고, 누적되는 대학 입시 재수생의 수를 줄이며, 과외 학습 등으로 지출되는 교육비의 일부를 대학 재정으로 흡수한다는 명분도 있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입학 정원 관리를 대학 통제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던 그간의 정책에서, 졸업 정원의 통제를 통해 대학을 관리하겠다는 정책상의 전환도 있었다.

문교부는 졸업 정원제 실시 첫해인 1981학년도에 전국 대학 입학 정원을 이전보다 무려 10만 5천 명을 증원한 31만 1천 명으로 책정하였다. 그리고 서울대학교는 시설 여건이 비교적 우수하다는 이유로 전체 증가율 60.28%를 훨씬 웃도는 96.9%를 증원하도록 하였는데, 그중에서도 시설 확충이 거의 불필요한 문과에 집중되었다. 가령 인문대학은 이전에 비해 360%, 경영대학은 325%, 법과대학은 227%, 사회과학대학은 126%의 입학 정원이 늘었다. 이에 따라 서울대학교의 1981학년도 모집 정원은 1980년의 3,315명보다 3,215명이 늘어난 6,530명이 되었다. 이는 1984년 졸업 정원인 5,020명의 130%를 입학 정원으로 산출한 것이었다.

그러나 서울대학교에서 졸업 정원제는 실시 첫해부터 문제점을 드러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모집 정원이 대폭 증가한 1981년 입시에서 사상 최대의 정원 미달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지원자 수가 모집 정원보다 무려 1,238명이나 적었다. 그 결과 1981년 입학자가 3학년이 되는 1983년, 비록 중간에 학사 징계로 제명된 학생이 있긴 했지만 졸업 정원제에 따른 강제 탈락자는 13명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1984년부터는 152명의 대량 탈락자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등 강제 탈락자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졸업 정원제는 대학 운영에 있어 매우 급진적인 조치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일반 사회와 대학 사회에서 반발이 매우 컸다. 그리고 시행 과정에서는 강제 탈락에서 발생하는 학생들의 저항과 교육 연구의 환경의 악화에서 비롯한 교수들의 반대가 많았다.

졸업 정원제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였지만 무엇보다 재학생 수의 폭발적 증가에 의해 과밀화 문제가 심각하였다. 강의실과 실험 실습실이 부족하였고, 교수 인력도 모자라

강의가 대규모화하였고, 이에 따라 강의의 질적 저하가 초래되었다. 연구 기능도 약화되었다. 학생들도 학사 감원제 실시로 인해 항상 강제 탈락의 부담을 지니고 생활해야 했다. 이는 학생 운동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군사 정부의 의도에 부합되는 것이기도 했다. 그러나 졸업 정원제로 인한 대학 인구의 증가는 한편으론 학생 시위의 대규모화를 이루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운동권과 비운동권 문화가 일찍부터 구분되는 양극화 현상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졸업 정원제 실시 이후 학생들의 집회에서는 으레 ‘졸업 정원제 철폐’를 요구하였다. 교수들도 졸업 정원제 개선을 촉구하였으며, 학외 여론도 모두 폐지 또는 개선(입학 학생들이 모두 졸업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다. 마침내 정부도 1983년 8월 19일, 전국총학장회의를 통하여 졸업 정원 보완책을 발표하였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았다.

1. 학년별 탈락률의 자율화.
2. 1년 1회 한도의 유급제.
3. 4학년 수료율의 자율화.
4. 4학년 수료자에 대한 학사 고시 자격 부여.
5. 조기 졸업제 해당자의 정원 외 운영.
6. 전과 제도의 자율화.
7. 학사 편입학의 정원 외 운영.
8. 후기 졸업제 운영.
9. 졸업 정원 운영 단위의 신축성 부여.
10. 편입학 제도의 권장.
11. 여자대학과 의과대학 등의 초과 모집 비율 조정.

이에 따라 서울대학교도 의예과, 치의예과, 가정대학, 간호학과의 초과 모집 비율을 조정하여, 1984년 신입생 모집 정원은 전해보다 126명이 준 6,400명이 되었다. 그리고 1984년부터는 학사 감원 단위를 학과에서 단과대학으로 변경하여 신축성 있게 운영함에 따라 사실상 중도 탈락생이 없게 되었다. 졸업을 못하고 수료만 한 학생도 대학졸업 자격시험을 거쳐 졸업 증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 1983년 12월에는 ‘조기졸업규정’이 제정되고, 4학년 수료 대상자에 대한 유급 규정이 만들어졌다. 이를 통해 졸업 정원을 보완하고, 수료가 아닌 졸업의 기회를 한번 더 부여하게 되었다.



그림 3-1-7 학부 모집인원 추이(1986~1993년). 출전: 1989년까지는 『통계연보』, 1990년부터는 『대학백서』를 참고하여 작성.

그럼에도 ‘정원’과 ‘면학 분위기’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 강제 탈락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 이에 1984년 학원 자율화의 물결을 타고, 학내에서는 졸업 정원제 폐지 요구가 더욱 거세어졌다. 그 결과 문교부는 1984년 6월, 1984년 이전 입학년도 대학별로 실시하는 ‘학사학위자격고사’를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실제 1985~1986년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시험에 응시생 대부분이 학사학위를 받았다.

이로써 졸업 정원제는 첫 입학생이 졸업하기도 전에 원래의 모습을 완전히 잃어 버려 사실상 폐지된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1985학년도에도 모집 정원과 졸업 정원(1988년도 졸업 정원)을 각각 1,081명, 120명씩 줄였으며, 1986학년도에도 모집 정원과 졸업 정원을 각각 345명, 255명씩 줄였다. 그리고 졸업 정원제는 1987학년도 입시를 마지막으로 완전히 폐지되었다.

졸업 정원제는 본래 한국의 사회 현실과 대학의 실정에 맞지 않는 제도였고, 실시에 있어서도 충분한 검토 과정 없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기에 이러한 실패는 애초부터 예정된 것이었다. 학생의 양적 증가를 통해 대학 교육의 질적 향상도 도모한다는 애초의 취지와는 달리, 양적 증가로 인해 대학 교육과 연구가 질적으로 하락하는 심각한 결과만을 초래하고 말았다. 특히 서울대학교의 경우 졸업 정원제 실시로 학부 정원이 급증하면서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 가려던 당초의 계획은 도저히 실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 3) 논술 고사 시행과 선지원-후시험제 전환

1981학년도 입시부터 본고사를 폐지하면서 신입생 선발의 주체가 되어야 할 대학은 수동적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 그리고 객관식 사지선다형 문항으로 치러지는 학력고사는 단편적인 지식의 암기력만을 평가할 뿐, 고차적인 사고 능력을 측정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1986학년도 입시에 논술 고사를 도입하였다.

서울대학교 논술 고사는 1문항 단독 과제형으로 출제하였으며, 시험 시간은 90분, 분량은 800자 이상 1,200자 이내로 하였다. 채점 기준은 ① 주제의 명료성과 타당성, ② 전체 구성의 논리성 및 조직성, ③ 제재(題材)의 적절성과 타당성, ④ 문장력이었는데, 어문계 교수 1인 이상을 포함하는 교수 3인 이상이 각각 채점한 결과를 산술 평균한 것을 취득 점수로 하였다. 1986학년도 서울대학교의 논술 고사 출제 문제는 “현대인과 일의 보람”이었고, 1987학년도는 “독서가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었다. 그 외 1986학년도 입시는 제1지망자 선발 비율을 70%에서 80%로 높였다.

〈표 3-1-8〉 1986학년도 입시 전형 요소와 반영 비율

〈인문·자연계〉

대학	전형 요소	학력 고사 성적		고교 내신 성적		논술 고사 성적		총점
		만점	반영 비율(%)	만점	반영 비율(%)	만점	반영 비율(%)	
	*동일 계열지방	374	66.3	170	30.1	20	3.6	564
	타 계열 지방	340	64.1	170	32.1	20	3.8	530

비고: \*대학입학학력고사와 동일 계열에 지원한 경우, 학력고사 취득 성적의 10%를 환산한 점수를 가산함.

〈예·체능계〉

대학	전형 요소	학력 고사 성적		고교 내신 성적		실기 고사 성적		논술 고사 성적		총점
		만점	반영 비율(%)	만점	반영 비율(%)	만점	반영 비율(%)	만점	반영 비율(%)	
미술대학	전학과	340	30.1	340	30.1	450	39.8	-	-	1,130
음악대학	전학과	340	20.0	510	30.0	850	50.0	-	-	1,700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340	35.1	300	30.9	300	30.9	30	3.1	970

1987학년도 입학 전형은 대체로 1986학년도와 마찬가지로 방식이었고, 반영 비율만 약간 변화하였다. 인문·자연계는 고교 내신 성적과 논술 고사 성적의 반영 비율을 약간 높였고(30 → 40%, 3.6 → 4%), 예술 및 체육 계열 일반 전형은 미술대학과 음악대학 모두 실기 고사 반영 비율을 줄이고 내신과 학력고사 반영 비율을 높였다.

그런데 논술 고사를 실시한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다. 먼저 서울대학교를 비롯해 여러 대학의 논술 문제가 너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바람직한 한국인이 되는 길”, “현대 사회의 사람다운 삶”, “종교와 인생” 등의 큰 주제를 겨우 원고지 4~5장에 소화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었다. 또 일부 대학에서 채점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의문시되었다. 이에 대학의 학생 선발권 강화와 객관식 위주인 학력고사의 단점 보완이라는 목표로 시작된 논술 고사는 시행 2년 만에 폐지되고 말았다.

7·30 교육개혁조치로 대학입학학력고사와 고교 내신 성적의 반영, 그리고 선시험-후지원제를 근간으로 하던 입시 제도는 1988학년도 입시부터 대폭 변화하였다.

첫째, 선시험-후지원 제도가 원서 접수 과정에서 과도한 눈치 작전을 유발하고, 경우에 따라 대규모 미달 사태를 빚는 폐해를 없애기 위해 선지원-후시험 형태로 바꾸었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이 학력고사의 실시·채점·결과 처리를 책임 관리하고, 총점·배점·과목별 가중치 등도 자율적으로 정하게 되었다. 둘째, 논술 고사를 없애는 대신 학력고사에 30% 내외로 단답형 주관식 문제를 출제하였다. 셋째, 이제까지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던 면접 고사 성적을 사범대학에서 2% 반영하기 시작하였다. 넷째, 인문대학·사회과학대학·자연과학대학·경영대학·농과대학 농업경제학과·미술대학·법과대학·사범대학 인문계·약학대학·음악대학 지원자는 학력고사에서 제2 외국어 5 과목(불어, 독어, 중국어, 일어, 서반아어) 중 1과목을 필수로 선택하도록 하였고, 가정대학 공과대학 농과대학 자연계 사범대학 자연계 및 체육교육과 수의과대학 의과대학 간호학과 지원자는 실업 및 제2 외국어 10과목 중 1과목을 선택하게 하였다. 다섯째, 동일계 지원의 경우에 부가하던 가산점 제도, 즉 학력고사에서 응시한 계열과 같은 계열

〈표 3-1-9〉 1991학년도 사범대학 입시 전형 요소 및 반영 비율

구분	학력고사	고교 내신	교직 적성·인성 검사	면접 고사	총점
만점	340점	170점	28점	28점	566점
반영 비율(%)	60	30	5	5	100

비고: 단, 체육교육과는 학력고사 30%, 고교 내신 30%,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5%, 면접 고사 5%, 실기 고사 30%로 전형함. 농과대학 농업 교육과 농업 전공도 같은 방식으로 전형.



그림 3-1-8 1993학년도  
입시 원서 접수 마지막날,  
원서접수 창구가 설치된  
체육관 앞 풍경

모집 단위에 지원할 경우 학력고사 취득 성적의 10%를 가산하여 전형하던 제도를 폐지하였다.

한편 서울대학교는 1988년 5월 ‘1989학년도 입학전형개선방안’을 문교부에 건의하여 대학 입학시험의 본고사 부활을 제안하였다. 이 제안에서 서울대학교

는 1989학년도 입학시험을 이틀에 걸쳐 시행하고, 국어·영어·수학 등 공통 과목 주관식 문제를 각 대학이 자체적으로 출제 채점하는 방식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문교부가 이미 1988학년도 입시 제도를 선지원-후시험 형태로 바꾸면서 시행 기간을 3년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이 제안은 실행될 수 없었다.

1989학년도와 1990학년도 입시 제도는 1988학년도 입시와 별 차이가 없었다. 1991학년도 입시는 3차 지망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수의과대학과 가정대학의 경우엔 제1지망자 중에서 모집 인원의 90%를 선발하는 것으로 모집 요강을 변경하였다. 또 사범대학은 면접 반영 비율을 5%로 늘리고, 교직 적성·인성 검사를 새로 도입하고 5% 반영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다른 단과대학들은 여전히 학력고사 성적(70%)과 고교 내신 성적(30%)만으로 전형하고, 면접 자료는 합격 불합격의 결정 자료로만 이용하였다.

논술고사 도입, 단답형 주관식 문제 출제 등 대학입학 학력고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력고사 위주의 입시 제도가 지닌 한계에 대한 지적이 계속 있었다. 객관식으로 고차원적 평가가 불가능한 점, 일률적인 평가로 대학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결국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는 새로운 시험의 도입과 대학별 고사 시행이 계획되었다.

#### 4) 특례 재입학 제도 실시와 정원 외 입학 제도 개편

##### (1) 특례 재입학 제도 실시

서울대학교는 그동안 민주화 운동의 산실이 되어, 이에 참여한 수많은 학생들이 학업을 끝맺지 못하고 중도에 학창 생활을 마감하였다. 그런데 이른바 ‘시국 관련 제적 학생’들에 대하여 정부가 재입학을 허용하면서, 1987년 9월 서울대학교는 이들을 재입학

시키기 위해 ‘서울대학교재입학에관한특례규정’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1980년 5월 17일부터 1983년 12월 21일 사이에 제명 처분된 학생, 군복무·복역 등의 사유로 1984년 1학기에 재입학하지 못한 학생, 1983년 12월 22일부터 1987년 7월 10일 사이에 학생 활동과 관련하여 제적·제명되거나 퇴학한 학생 등이 재입학 대상이었다. 학교 측이 규정을 개정했지만 적용 당사자인 서울대구속청년동지회 산하 ‘복학대책 및 학원민주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재입학 대상자 설정 범위, 재입학 대상 학생의 징계 철회, 등록금 반환 등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1987년 9월 21일 조완규 총장 주재로 열린 입시 학장회는 시국 관련 제적 학생으로서 복학 신청한 281명 중 257명의 복학을 결정하였다. 이들 257명은 일반 징계 제적 15명, 미등록 제적 29명, 퇴학 4명, 시국 관련 학사 제명 209명이었다. 이때 1983년 12월 22일 이전 제적자 12명과 학생 활동 관련 미확인자 2명은 복학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서류 미비자 10명은 교수회의에서 재심하도록 결정하였다.

학생들이 제기한 문제 중 등록금 반환 문제는 1987년 2학기 등록금을 특례 대여금 형식으로 처리하였다. 징계는 자동으로 철회됐으며, 일반 학사 제적생의 복학 문제는 대학 정원이 대통령령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이때 해결되지 못하고 계속 협의를 진행하였다.

1987년 9월 입시 학장회를 통해 149명이 추가로 복학되었다. 이후 1988년 1학기부터 1989년 1학기까지, 재입학 대상자가 이전 소속 학과의 지도 교수와 면담하고 학과장 확인을 받아 수시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대학본부도 신청 상황에 따라 수시로 이를 심의하였다.

서울대학교는 1988년 3월에 서울대학교재입학에관한특례규정을 다시 개정하여 1973년부터 1983년 2학기 사이에, 학생 활동과 관련된 미등록 제적자, 학사 제명자 및 퇴학자 중 복학하지 못한 학생들에게도 재입학을 허가하였다. 이에 따라 1988년 1학기에 학장회의 의결을 거쳐 454명이 재입학 허가를 받았다.

한편 학생들은 계속해서, “특례 재입학의 시기와 대상 제한 철폐”, “부당 징계 조치의 전면 백지화를 통한 명예 회복”, “재입학 해당 시기 등록금 면제 공고”, “복학 대상자와 교수 간의 공동 실천 위원회 구성”, “부당 징수 등록금 이월과 가계 빈곤자를 위한 특별 대여 장학금 지급” 등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1989학년도 1학기까지로 결정된 재입학 기간을 변경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견지하였다.

1993년에는 1987년 이후 제6공화국 시기에 학생 운동과 관련하여 제적된 학생들의 재입학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1988년 총장실 점거 사건으로 제적된 학생들을 비롯해, 이 시기 시국 사건으로 수배·투옥되어 미등록 제적된 학생들은 100여 명에 달

〈표 3-1-10〉 특례 재입학생 현황(1987~1995년)

(단위: 명)

구분	1987년	1988년	1989년	1990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1학기	-	454	233	34	15	3	14	48	10
2학기	406	193	53	17	-	5	144	13	6
합계	406	647	286	51	15	8	158	61	16

출전: 서울대학교 50년사 편찬위원회, 1996 『서울대학교 50년사』, 737쪽.

하였다. 1993년 3월, 교육부는 5공화국 말기인 1987년 7월 이후 시국 사건 및 학내 분규와 관련돼 제적된 학생들을 전원 재입학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대학교도 규정을 개정했고, 1993년 2학기에 1973년 3월부터 1993년 2월 사이에 학생 운동으로 제적된 144명이 재입학하였다. 서울대학교재입학에관한특례 규정의 개정으로 1987년 2학기 이래로 1995년까지 총 1,663명이 재입학하였다.

## (2) 정원 외 입학 제도 개편

1970년대 후반~1980년대 서울대학교의 정원 외 입학 제도에는 학사 편입학제, 특례 입학제, 군 위탁생, 외국인과 교포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 등이 있었다. 학사 편입학 제도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에 한하여, 학과별 졸업 정원의 10%와 2% 이내에서 각각 대학 2학년과 3학년(의학과, 치의학과는 본과 1학년 또는 예과 2학년)에 편입학할 자격을 부여하였다. 편입학은 각 단과대학 주관으로 실시하는 편입학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허용하였는데, 전형 요소로 외국어, 전공 및 구술 고사가 있었다. 1988학년도부터 졸업 정원제에서 입학 정원제로 전환함에 따라, 학사 편입학 조항도 개정하여 학과별 졸업 정원 항목을 입학 정원으로 바꾸었다.

특례 입학제는 1977학년도부터 실시되었다. 애초 이 제도는 근무지 선택의 폭이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외교관 자녀들의 교육적 안정을 위해 특별히 혜택을 주자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이후 교육법 시행령 69조에 의거, 해외에서 2년 이상 근무한 학자, 공무원, 기업체 임직원, 언론 기관 특파원 자녀들에게도 혜택을 주었다. 필답 고사, 구술 고사, 면접, 서류 심사를 거쳐, 매년 20여 명 정도를 선발하였으며, 필답 고사 과목은 인문계와 자연계의 경우 국어·수학·국사·외국어 등 4과목, 예·체능계는 국사와 외국어 2과목이었다.

그런데 1989년 2월, 1989학년도 특례 입학시험에서 합격권에 들고도 외교관 등 해외



〈표 3-1-11〉 정원 외 입학 제도의 종류별 입학 현황(1986~1993년)

(단위: 명)

입학 제도 \ 연도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학사 편입학	45	53	60	65	65	65	60
외교관 등 자녀	9	20	20	26	19	20	20
재외 국민 모국 수학생 및 교포 자녀	20	26	26	42	37	33	22
군 위탁	22	10	9	7	10	17	15
외국인	14	23	19	30	24	16	10
계	110	132	134	170	155	151	127

출전: 각 연도 『통계연보』를 참고하여 작성.

공무원 자녀에 대한 가산점 부여로 탈락한 해외 상사 주재원 자녀 6명이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 소송을 계기로 서울대학교가 1987학년도부터 해외 공무원 자녀에게 가산점을 20% 부여한 것이 드러났는데, 그해 11월 법원은 학생들의 손을 들어 주었다. 학교 측은 이는 명백한 대학 자율권 침해라며 대법원에 상고하면서도, 교육적 견지를 내세워 이들 6명의 학생에게 1990학년도 입학을 허용하였다. 1990년 9월,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서울대학교는 패소하였고, 학내에서 특례 입학제를 폐지하라는 여론이 높아졌다.

외국인이 정원 외로 입학할 수 있는 제도는 1981학년도부터 시행하였다. 이해 제정된 ‘외국인 학생 수학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외국인 학생들은 서울대학교에서 4개 학기 동안 비정규 청강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1992년 11월, ‘서울대학교특별생수학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1993학년부터 외국인뿐만 아니라 교포 및 학술 교류 협정을 체결한 대학의 교환 학생도 이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게 하였다.

### 5) 석·박사 연계 과정 제도 도입

1987년에 작성된 「서울대학교 장기발전계획(1987~2001년)」은 대학원 입시 개선 방안으로 석 박사과정의 입학시험을 통합하여 연계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입학시험이 분리되어 있어, 석사학위를 받은 뒤 박사과정에 진입하기 위해 또

한번의 입학시험을 치러야 하므로 대학원과정 학생들의 연구 활동이 일시적으로나마 중단되기 때문이었다.

1988년 초 학칙 개정을 통해 「서울대학교 장기발전계획」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다. 즉, 박사과정의 선발 전형 방법과 선발 기준을 변경하여 석·박사과정을 연계시키고, 박사과정의 선발 기준을 기존의 필답 고사 위주에서 탈피하여 서류전형 및 구술고사를 포함하도록 하였다. 1990년 석·박사과정을 통합하여 연계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1991학년도 입시부터 이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석사과정 입학생 중 매 학년도마다 학과(전공)별로 일정 비율(50%)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대학(원) 및 학과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 소정의 심사 및 절차를 통과한 학생은 입학시험을 생략하고 박사과정에 진학하였다. 이 제도로 박사과정에 진학한 학생은 1991학년도 91명, 1992학년도와 1993학년도 110명, 1994학년도 129명, 1995학년도 124명, 1996학년도 194명, 1997학년도 251명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90% 이상이 자연과학대학과 공과대학 학생이었고,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사범대학에서는 거의 없었다.

## 제 4 절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선발 방식의 다양화(1994~2006년)

### 1)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대학별 고사

대학입학 학력고사와 고교 내신 성적을 주요 전형 자료로 했던 입시 제도는 1994학년도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는 새로운 평가 시험이 도입되고 대학별 고사가 부활함으로써 크게 변화하였다.

새 대입 제도의 시작은 1989년 8월 30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날 문교부는 1993학년도부터 시행할 새 입시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였는데, 핵심 내용은 “대학입학적성시험과 고교 내신 성적을 필수 전형 자료로 하고, 대학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대학별 고사를 실시한다”는 것이었다. 고교 교육 정상화라는 취지에서 내신 비중을 30%에서 40%로 높이고, 13년 만에 대학별 고사를 부활시키기로 한 것이 특징이었는데, 무엇보다 대학입학적성시험이라는 새로운 시험이 크게 주목 받았다.

대학입학적성시험은 기존의 학력고사가 고등 정신 함양을 저해하고 단순 암기 교육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음에 따라, 이를 “범교과적인 능력을 측정하여 대학 수학에 필요한 정신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대체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1990년 2월 8일에 대통령 자문 기구인 교육정책자문회가 새 시험 제도를 도입하기보다 학력고사를 유지·개선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도 하는 등 시험의 효과에 대한 의문도 강하게 제기되었다. 이에 문교부는 1990년 2월 28일, 새 대입 제도를 일년 늦춰 1994학년도부터 시행하기로 수정하는 대신, 전해 발표한 개선안의 내용은 그대로 확정하였다.

1991년 1월 8일, 노태우 대통령이 연두 기자 회견에서 “1994학년도부터 대학 입시를 자율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부터 ‘대학 입시의 자율성’ 문제가 부각되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자면 이때의 자율성이란 전형 방식의 자율화가 아니라,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의 자율화였다. 교육부는 이전부터 내신은 40% 이상 의무적으로 반영하되, 적성 시험과 대학별 고사의 반영 비율은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혔다. 교육부 장관 자문 기구인 대학교육심의회는 심의에서도 대학입학적성시험의 출제 방법 및 실시 횟수와 함께 반영 비율이 논란이 되었다. 교육부는 1991년 4월 2일 최종 확정안을 발표하였는데, 결국 대학별 고사와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 비율은 대학 자율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1991년 3월 12일, 대학교육심의회는 적성시험이 적성 검사와 혼동된다 하여 대학입학적성시험이란 명칭을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바꾸기로 결정하였다.

정부가 새로운 입시안을 발표함에 따라 서울대학교도 그것에 바탕하여 새 입시 제도를 모색하였다. 서울대학교는 1991년 8월에 대입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작업을 시작하고, 1992년 3월 30일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안에 대한 교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4월 2일 입시 요강을 확정 발표하였다.

이날 발표에서 무엇보다 대학별 고사 과목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국·영·수 중심으로 4과목을 치르겠다는 서울대학교 발표에 대해, 일선 고교와 일부 언론은 “고교 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처사”, “집단 이기주의”라고 비난하였다. 이들은 서울대학교가 요강대로 대학별 고사를 치르면 고교 교육이 국·영·수 위주로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과열 과외가 더욱 극성을 부릴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13년 만에 시행되는 대학별 고사가 과거 본고사 시행 때의 폐해를 재현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였다. 이에 대해 서울대학교는 ‘우수한 인재 선발’과 ‘대학 자율 선발’을 내세우며 반박하였다.

대학별 고사의 제2 외국어 과목 중 일본어가 제외된 것도 논란이 되었다. 서울대학교는 일본어과가 없어 대학별 고사를 대비할 수 없고, 일본어는 아직 학문적 필요성이 덜

〈표 3-1-12〉 1994학년도 입시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

(단위: %)

계열		고교 내신	수능	대학별 고사	실기 고사	면접·교직	합계
인문·자연계		40	30	30			100
사범계		40	30	20		10	100
체육교육과		40	20	10	20	10	100
미술대학		40	15	10	35		100
음 대	전학과 (이론제외)	40	10		50		100
	작곡 이론	40	30		30		100
	국악 이론	40	30		30		100

하다는 것을 그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학부모를 비롯한 사회 각계의 반발은 거세어, 4월에는 한 학부모가 이는 헌법에 명시된 교육 기회 균등 보장과 평등권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헌법 소원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그해 10월 1일, 서울대학교가 입시 과목에서 일본어를 제외한 것은 대학 자율권 행사라고 파악하여 이를 기각하였다.

이듬해인 1993년 3월 12일, 서울대학교는 1994학년도 대학별 고사 출제 기본 방침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단순 암기에 의하여 획득할 수 있는 지식을 평가하기 보다는, 해당 영역의 기본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문제 해결의 과정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서술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는다.

이러한 원칙 하에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제2 외국어 등 구체적인 과목별 출제 방침을 밝혔는데, 특히 국어의 경우 ‘문학 작품의 이해’ ‘요약’ ‘논술’ 등 세 유형의 시험을 계획하여 종전의 시험들과 크게 다른 방식을 제시하였다. 이후 서울대학교는 출제 유형별 문항 개발과 타당성 평가, 난이도 조정에 관한 연구들을 11월 말까지 계속하였다. 그 일환으로 수도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어와 영어에 대한 실험 평가를 실시하였는데, 9월 12일의 제2차 실험 평가에는 수도권 지역 20개 학교의 201명이 참여하였다.

실제 대학별 고사는 1994년 1월 6~7일 이틀간 시행되었으며, 학내외로부터 대체로 평이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중 국어 논술 문제를 보면,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기본 이념을 설명하는 지문을 제시한 다음, “이를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아, 자본주의 경제 체제

의 운영에 따르는 중요한 문제점 몇 가지를 지적하고, 그 문제점들이 생기게 된 원인을 밝혀라”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이해 입시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역별 배점은 <표 3-1-12>, <표 3-1-13>과 같다.

1995학년도 입시는 1994학년도의 큰 틀이 그대로 유지된 채, 몇 가지 사항만 조금 바뀌었다. 먼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역별 가중치 부여 비중에 변화가 있었다. 인문 계열과 사범 계열의 경우, 수리 탐구 영역의 가중치가 20%에서 40%로 증가하였으며, 자연 과학 계열의 경우 외국어(영어) 영역 가중치 200%를 삭제하였다. 음악대학은 수학능력시험 반영 비율을 15%에서 10%로 낮추고, 대신 실기 고사 비율을 5%로 늘렸다. 대학별 고사는 필수 과목 선정과 과목별 배점이 조금 바뀌었다. 자연 과학 계열에 영어가 추가되었고, 이에 따라 국어(130점 110점)와 수학Ⅱ(150점 120점) 및 과학(120점 90점) 배점이 하향 조정되었다. 또 인문 사회계열의 경우 영어와 수학Ⅰ의 배점이 각각 120점과 90점에서 110점과 100점으로 조정되었다. 사범대학의 자연 과학 계열의 경우 필수 과

<표 3-1-13> 199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역별 배점

계열(학과)		영역	당초 배점	환산 배점	비고
인문 계열 (사범계 포함)		언어	60	48	총점(200점) 중 가중치 20%를 적용한 수리·탐구 영역 만점을 120점으로 하고 나머지 점수를 배점 비율로 환산한 것임.
		수리·탐구	100	120	
		외국어(영어)	40	32	
		합계	200	200	
자연 과학 계열 (사범계 포함)		언어	60	30	총점(200점) 중 가중치 200%를 적용한 외국어(영어) 영역 만점을 120점으로 하고 나머지 점수를 배점 비율로 환산한 것임.
		수리·탐구	100	50	
		외국어(영어)	40	120	
		합계	200	200	
예 술 · 체 육	미술대학	언어	60	45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5% 반영함에 따라 만점 200점을 150점으로 환산한 것임.
	음악대학	수리·탐구	100	75	
	(이론 관련 전공 제외)	외국어(영어)	40	30	
		합계	200	150	
계 열	사범대학	언어	60	60	
	체육교육과	수리·탐구	100	100	
	음악대학	외국어(영어)	40	40	
	작곡과(이론) 국악과(이론)	합계	200	200	

목으로 영어가 추가되었다.

이해 입시를 치르고 난 뒤 교무처는 전형 요소별 변별력 및 합격 공현도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내신이 변별력이 가장 낮았고, 수학능력시험도 매우 낮은 변별력을 보인 반면, 대학별 고사가 두드러진 변별력을 보였다. 그리고 각 전형 요소의 배점을 감안하여 합격자와 불합격자의 평균 성적 차이 비율을 구한 합격 공현도에서도, <표 3-1-14>에서 보이듯이 대학별 고사는 수능에 비해 거의 2배에 이르는 공현을 한 것이 밝혀졌다.

하지만 1996학년도 입시에서는 오히려 대학별 고사 반영 비율을 40%에서 30%로 줄이고, 과목 수와 문항 수를 줄이는 등 대체로 대학별 고사의 비중이 상당히 감소하였다. 이는 대학별 고사가 중고등학교 교육을 파행적으로 이루어지게 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기도 했고, 대학별 고사를 폐지하려는 정부 정책의 영향 때문이기도 했다. 서울대학교가 1996학년도 입시안을 마련할 당시 이미 대학별 고사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새 입시안 내용이 알려져 있었다.

이해 입시에서는 대학별 고사 필수 과목과 과목별 배점이 바뀌었을 뿐 아니라,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도 바뀌었다. 우선 세 유형으로 나뉘었던 국어에서 ‘요약’이 빠지고, ‘문학 작품의 이해’와 ‘논술’이 각각 논술Ⅰ, 논술Ⅱ로 바뀌었다. 또 자연 과학 계열에서는 대학별 고사에서 자연 과학 선택 과목 시험이 없어지고, 대신 수학능력시험 수리 탐구영역Ⅱ에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음악대학 작곡과와 국악과 이론 전공의 경우 아예 대학별 고사를 없앴다.

1997학년도 입시부터는 3년 간 시행하던 대학별 고사를 대폭 축소하고 논술 한 과목만 시행하였다. 이는 1995년 12월 19일에 교육부가 발표한 ‘새대학입학전형제도시행기

<표 3-1-14> 1995학년도 입시 전형 요소별 합격 공현도의 비

계열	대학별 고사	수학능력시험	내신
인문계	13	7	1
자연계	10	4	1
사범대학 인문계	6	4	1
사범대학 자연계	6	3	1
체육계	2	2	1
미술대학	5	3	1
음악대학	5	2	1

출전: 『서울대소식』 249호, 1995년 4월 12일.

본계획'을 따른 것이었는데, 그 근원은 그해 5월 31일에 발표된 김영삼 정부의 교육 정책의 기본 구상을 담은 '신교육체제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이었다.

이 개혁안은 세계화, 정보화로 표현되는 '문명의 전환기'에 대처하기 위한, 총 9가지 교육 개혁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그중 하나가 "국민의 고통을 덜어 주는 대학 입학 제도"였다. 입시 제도와 관련한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았다.

국·공립대학은 국가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고, 사립대학은 초·중등 교육의 정상화, 국민의 사교육비 부담 축소 등의 원칙 하에 학생 선발 기준과 방식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학생을 선발하도록 한다.

그리고 국·공립대학은 필수 전형 자료로 종합 생활 기록부를 사용하고, 선택 전형 자료로 수능시험, 논술, 면접, 실기 등 다양한 전형 기준에 의해 학생을 선발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유도하고 과열 과외를 완화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사립대학에는 학생 선발 자율권을 준다는 원칙을 제시하였으나, 국·공립대는 여전히 국가 관리 하에 두겠다는 생각을 분명히 하였다. 구체적인 방식으로 1997학년도부터 국·공립대는 국·영·수 위주의 대학별 고사를 실시할 수 없게 하였고, 종합 생활 기록부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였다.

이 종합 생활 기록부는 기존의 생활 기록부와 달리 특별 활동, 단체 활동, 봉사 활동, 자격증 획득, 각종 대회 참가 및 입상 실적, 성격 및 품성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학생의 학교 생활이 총체적으로 드러나도록 하였다. 또 성적 평가는 상대 평가에서 성취 기준 평가로 바꾸고, 교과별 성취 수준과 석차는 기록하되 전 교과 총점에 대한 전체 석차는 기록하지 않기로 하였다.

다만, 국·공립 각 대학은 입학 전형 시 전공 분야에 따라 종합 생활 기록부의 특정 내용에 가중치를 부여하거나 내용을 반영하지 않을 정도의 자율성을 가졌다. 또 대학별 고사는 폐지해야 하지만 논술 시험은 존치할 수 있었다. 이 개혁안은 구체적인 실현의 지보다 방향 제시의 성격이 강해 그 실효성을 회의적으로 보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며, 종합 생활 기록부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 시비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1996년 6월, 서울대학교는 정부의 교육 개혁안에 기초하여 1997학년도 대학 입시 시행 지침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논술 고사는 1997년 1월 3일에 실시되었다. 계열 구분 없이 같은 문제로서 프랑스 작가 생텍쥐페리의 소설 '어린왕자'의 일부분을 지문으로 제시한 뒤, "현대 사회에서 개

〈표 3-1-15〉 1997학년도 입시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

계 열 별	총 점	수학능력시험 성적							논술	실기	면접	교직 적성	종합생활 기록부	비고	
		반영 비율	영역별 배점	언어	수리 1	수리 2	외 국 어	영역별 가중치							
인문· 사회	800	55%	440	120	100	120	100	수리1: 20 점외국어: 20점	32 (4%)	-	8 (1%)	-	320 (40%)		
자연 대학 과학	800	57%	456	120	108	120	108	수리1: 28점 외국어: 28점	16 (2%)	-	8 (1%)	-	320 (40%)		
사범 대학	800	50%	400	120	80	120	80	-	32 (4%)	-	32 (4%)	16 (2%)	320 (40%)		
체육 교육	800	30%	240	72	48	72	48	-	32 (4%)	160 (20%)	32 (4%)	16 (2%)	320 (40%)		
미술 대학	800	20%	160	48	32	48	32	-	32 (4%)	280 (35%)	8 (1%)	-	320 (40%)	수능 계열 20% 이내	
음악	이론 제외	800	10%	80	24	16	24	16	-	-	400 (50%)	-	-	320 (40%)	수능 계열
대학 전공	이론 전공	800	30%	240	72	48	72	48	-	-	240 (30%)	-	-	320 (40%)	30% 이내

인은 거대한 조직에 속해 있으면서 대부분이 익명의 존재로 방치되어 있다. 참다운 인간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이 글에서 암시하고 있는 개인적 차원의 노력이 어떠한 의의와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논하라”를 출제하였다.

## 2) 고교장 추천제와 특차 전형제 도입

서울대학교는 1998학년도부터 고등학교장 추천 입학 제도, 1999학년도부터 특차 모집 제도를 도입하여 본격적으로 전형 방식을 다양화하였다.

1997년 3월 서울대학교는 국내 최초로 고등학교장 추천을 통한 ‘추천 입학제’를 시행할 방침을 정하였고, 9월 25일 학장회의에서 이를 최종 확정하였다. 1998학년도 입시



부터 ‘수시 선발’ 방식으로 총 3단계에 걸친 다단계 사정으로 학생을 선발한다는 계획이었다. 즉, 1차 사정에서 서류 심사(교장 추천서, 자기소개서, 수학 계획서)와 고교 생활 기록부 등을 기초로 모집 인원의 2~3배를 뽑고, 이후 2차 사정에서 면접시험과 함께 지원 학과 및 전공과 관련한 논술 고사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수능 성적이 최저 학력 기준에 미달하는 학생을 제외하여 합격자를 판정하는 시스템이었다.

추천 인원은 각 학교당 2명 이내였는데, 고교 재학 시 수학·과학 올림피아드에서 동상 이상을 수상한 자는 별도로 추가 추천이 가능하였다. 또 음악대학의 경우 서울대학교가 인정하는 전국 규모 콩쿨 및 해외 콩쿨에서 동상 이상을 수상한 자도 추가로 추천할 수 있었다. 최저 학력 기준은 수학능력시험 성적 전국 계열별 상위 10% 이내였는데, 예외적으로 미술대학은 예체능계 상위 5% 이내, 사범대학 체육교육과는 학력 우수자의 경우 예체능계 10% 이내, 운동 기능 우수자는 예체능계 25% 이내로 하였다. 음악대학은 성적 제한이 없었다.

시행 첫해의 원서 모집 결과, 385명 모집에 1,891명이 지원하여 평균 4.9: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중 1차로 1,332명이 합격하였고 논술과 면접을 거쳐 348명의 2차 합격자

〈표 3-1-16〉 고교장 추천제 추천 조건과 인원 변화

연도	추천 조건과 인원
1998	학교당 2명 이내
1999	고등학교 3학년 재적생 수 기준에 의한 추천(재적생 수는 98년 8월 1일 기준) -3학년 재적생 수 100명 미만: 2명 -3학년 재적생 수 100명 이상~300명 미만: 3명 -3학년 재적생 수 300명 이상: 4명
2000	고등학교 3학년 재적생 수 기준에 의한 추천(재적생 수는 99년 8월 1일을 기준) -3학년 재적생 수 100명 미만: 2명 -3학년 재적생 수 100명 이상~300명 미만: 3명 -3학년 재적생 수 300명 이상~600명 미만: 4명 -3학년 재적생 수 600명 이상: 5명
2001	고등학교 3학년 재적생 수 기준에 의한 추천(재적생 수는 2000년 8월 1일을 기준) -3학년 재적생 수 100명 미만: 3명 -3학년 재적생 수 100명 이상~300명 미만: 4명 -3학년 재적생 수 300명 이상~600명 미만: 5명 -3학년 재적생 수 600명 이상: 6명

〈표 3-1-17〉 연도별 고교장 추천제 현황(1998~2001년)

(단위: 명)

연도	모집 인원	지원자 수	최종 선발 인원
1998	385	1,891	330
1999	557	3,360	486
2000	705	3,451	572
2001	970	4,105	789

가 배출되었다. 그러나 이들 중 18명이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결국 최종 합격자는 330명이었다.

애초 고교장 추천 입학제를 도입한 취지는 학력 위주의 기존 선발 제도를 보완하고, 전인적 자질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방법을 개발하여, 잠재 능력을 포함한 장기적 수학 능력을 평가한다는 것이었다. 또 지역별 교육 여건의 불균형으로 인한 낙후 지역 학생의 불이익을 완화하는 것, 즉 서울대학교에 단 한 명의 합격자도 내지 못한 전국 1천 5백여 개 고등학교의 우수 학생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그러나 실제 일선 고등학교는 학업 성적만으로 추천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전인적 자질 평가”라는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합격생들의 출신 지역별 비율이 각 지역 고등학교 인원 분포와 비슷해지고, 이전 3년 간 합격자가 없던 56개 고등학교에서 합격자를 1명 이상 배출하는 등 고교장 추천제는 학내외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에서 실시한 조사에서도 고교장 추천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일반 입학생들보다 자신의 적성과 학문적 흥미에 따라 전공을 선택한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입학 후 대학 생활에도 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고교장 추천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대학교는 이후 고등학교별 추천 인원을 늘리고, 추가 추천자 자격 요건을 보다 세분화하는 등 고교장 추천제를 정비하였다.

고교장 추천제는 시행 첫해인 1998학년도부터 2001학년도까지 모집 인원과 지원자 수 모두 두 배 이상 늘어났는데, 이러한 결과가 이 제도의 성공을 입증한다. 고교장 추천제는 2002학년도부터 수시 모집 제도가 시행되면서 수시 모집에 흡수·폐지되었다.

한편 서울대학교는 1998년 4월, 1999학년도부터 특차 전형제를 도입하기로 발표하였다. 특차 전형제는 “수능 성적 위주로 일부 학생을 선발함으로써, 학력은 우수하지만 내신 등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학생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도입되었다. 또 ‘고등교육법시행령’에 의해 특차 전형에 합격한 사람은 정시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므로, “서울

대를 지원하는 학생은 한 번의 기회 밖에 없는 반면, 타 대학 지원생들은 특차와 정시 모집 두 번의 응시 기회를 갖는 불균등한 상황”을 해소한다는 이유도 있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전형 방식은 수능 성적 계열별 3% 이내를 조건으로, 수능 성적과 학생부 성적을 8 대 2로 반영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서울대학교의 계획이 발표되자 학내외에서 반대 의견이 많이 제기되었다. 특히 몇몇 사립대학들은 ‘서울대가 우수한 학생을 미리 독식하려는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하였다. 또 ‘수능 반영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수능 중심의 입시로, 전인 교육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지적도 있었다. 주요 일간지들도 예외적으로 사설을 통해 서울대학교의 특차 전형제 도입 계획을 비판하였다. 반면 특목고와 비평준화 지역 고교를 비롯해 일선 고교 교사와 학생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대조를 이루었다.

서울대학교가 특차 모집제를 도입한 것은 “합격자 중 상당수가 타 대학으로 빠져나감으로써 미등록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있었는데, 실제 특차 모집 시행에 적극적인 곳은 타 대학 의과대학 등으로 합격생이 많이 빠져나가던 공과대학, 자연과학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등 이공 계열이었다.

특차 전형 시행 첫해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음악대학, 사범대학 체육교육과를 제외한 10개 단과대학에서 814명(전체 모집 정원의 16.6%)을 모집하였는데, 5,034명이 지원하여 최종적으로 806명을 선발하였다. 전형 요소는 대학수학능력시험(80%), 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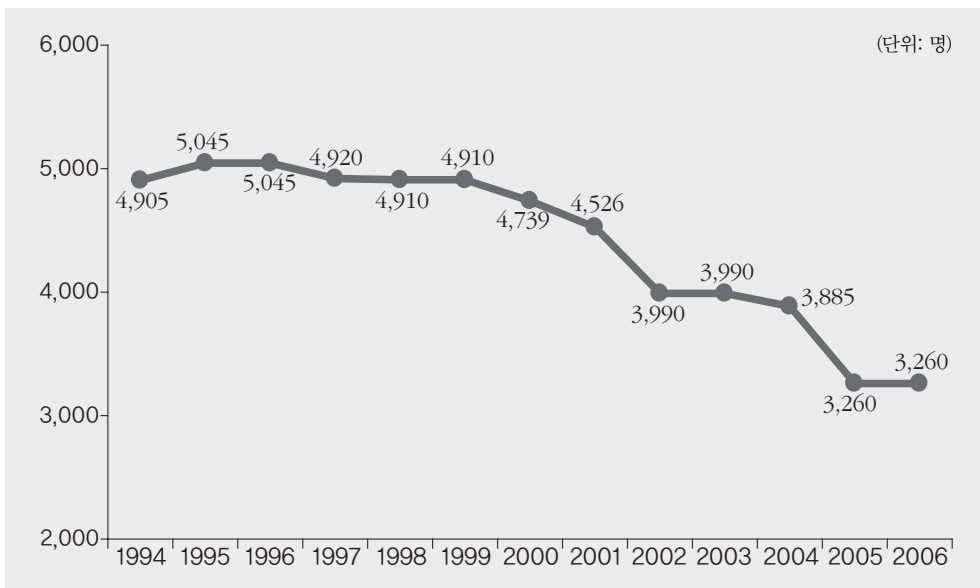


그림 3-1-9 학부 입학 정원 추이(1994~2006년).  
출전: 『대학백서』, 『2002~2006 비전과 변화』를 참고하여 작성.

생활 기록부(20%), 면접, 실기(음악대학)였으며, 최저 학력 기준은 수능 석차 백분율 상위 10% 이내였다. 2000학년도 입시에는 총 741명 모집에 4,981명이 지원하였고, 미술대학은 이해부터 특차 전형을 시행하지 않았다. 2001학년도 입시엔 총 738명 모집에 4,393명이 지원하였다.

시행 초부터 논란에 휩싸였던 특차 전형제는 정부가 입시 과열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금지함에 따라 결국 2001학년도를 마지막으로 사라졌다. 특차 전형제는 비록 고교장 추천제만큼의 호응과 평가를 받지 못하였지만 3년 간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는 데 나름대로 역할을 다하였다.

정시 모집의 전형 방법은 1997학년도부터 2001학년도까지 대체로 비슷하였다. 다만 1998학년도부터 음악대학 이론 전공에서 논술 과목을 추가하여 5% 반영하였으며, 2001학년도에는 수학능력시험 선택 과목에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등 제2 외국어 영역을 추가하였다.

한편, 2000학년도부터 1987년에 졸업 정원제가 폐지된 이후 처음으로 학부 정원을 대폭 감축하여 학부 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사실 서울대학교는 대학원 중심 대학을 지향하는 ‘서울대학교 장기발전계획’을 세우며 일찍부터 학부 정원 감축을 구상하였다. 그러나 졸업 정원제 등 현실적 제약 때문에 번번이 실패하였고, 1992학년도부터는 과학 기술계 인력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공과대학 학생 증원 계획에 의해 오히려 입학 정원이 증가하였다. 그러다 1999년 하반기 ‘두뇌한국 21(BK21)’ 사업에 참여하면서, 공과대학, 자연과학대학 등 이 사업에 참여하는 학과를 중심으로 학부 정원 감축을 실현하였다. 이후 학부 정원은 계속 감축되는 추세로, 2005학년도의 경우 모집 정원을 3,318명으로 줄였다.

### 3) ‘무시험 전형’ 과 수시 모집 실시

1998년 10월 19일, 김대중 정부는 ‘200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을 발표함으로써 또 한번 입시 제도의 대변화를 꾀하였다. 이 안은 “학력보다 능력이 주가 되는 사회를 구현하고, 대학의 학생 선발 권한을 존중하는 대입 제도 개선”을 천명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무시험 전형’과 ‘대입 전형의 자율화·다양화’를 주요 방침으로 내걸었다. 이때 무시험 전형은 “대학에서 지필 고사 위주의 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시험 또는 교과

점수 비중을 현저히 줄여 다양한 전형 자료를 중시한다는 의미”로 사용된 표현이었는데, 종종 지필 고사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으로 오해를 받기도 하였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내용과 이후 제시한 안들을 종합하여 교육부의 2002학년도 입시안을 주제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다양한 전형 자료 활용
  - 학교 생활 기록부: 국·공립대학에 의무 반영케 하던 것을 자율화. 대학은 교과 성적만 반영하던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학생의 특기, 각종 활동·기록 등을 중요하게 반영.
  - 대학별 고사: 논술 고사와 실기 고사 등을 실시, 그러나 과거 국·영·수 위주의 대학별 고사 폐해를 인정하여 국·영·수는 실시할 수 없음.
  - 대학수학능력시험: 총점 위주로 석차화되지 않도록 총점을 폐지하고, 영역별 점수만 표시하여 모집 단위에 다른 영역별 반영을 유도.
  - 면접 활성화: 학력 이외의 인성·가치관·도덕성·사고력·지도력·의사 표현 능력 등을 평가하고, 제출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심층 면접으로 다양하게 활용.
- 특별 전형 활성화
  - 특기나 수상 실적·실업계 고교·산업체 근무 등 경력에 의한 특별 전형과, 특수 교육 대상자·농어촌 출신자·소외 계층 대상 전형 등 보상적 차원의 특별 전형 모두 채택 권장.
- 정시 모집과 수시 모집으로 이원화
  - 대학이 시간을 갖고 다양한 전형을 할 수 있도록 수시 모집 제도 도입. 입시 과열을 부추긴 특차 모집은 폐지. 3학년 1학기의 조기 선발제 도입(10% 범위 내).
- 대학의 독자적 학생 선발 방법 권장
  - 시험 성적 비중이 낮아지는 대신 비교과 영역의 다양한 자료들의 비중이 높아지는 독자적 학생선발 방법 확산 촉진. 대표적인 것이 추천제. 추천자를 학교장 뿐만 아니라, 교과 교사, 종교 지도자, 교육감, 자치 단체, 기업체 등으로 확대.

교육부가 2002학년도 입시안을 발표한 후, 이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함께 제기되었다. 기본적인 취지와 대학에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한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고,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떨어뜨릴 가능성, 면접의 모호한 평가 기준, 추천자 확대에 따른 추천인 신뢰도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하는 의견이 많았다.

그런 가운데 서울대학교도 정부의 새로운 입시안에 맞추어 2002학년도 입시를 준비하였다. 특히 2000년 8월, 서울대학교 입시 제도를 연구 기획할 기관으로 교무처 내에 입학 관련 부서를 독립시켜, 입시관리센터를 신설함으로써 2002년 입시 준비를 본격화하였다. 입시관리센터는 2001년 1월 입학처로 독립·승격되었다. 그리고 2000년 5월 22일에 '2002년신입생선발방안'을, 2001년 1월 17일에는 '2002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

시행 계획에 따르면 전형은 정시 모집과 수시 모집으로 분리하고, 각 모집 과정을 2단계로 나뉘(음악대학 정시 모집은 1·2단계 통합), 1단계에서 2~3배수를 뽑은 뒤 1단계 성적을 반영하지 않고 2단계 전형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 면접 및 구술 고사 비중을 키워, 정시 모집 2단계에서 15~25%, 수시 모집 2단계에서 100%까지 반영하기로 했으며, '농어촌 학생 및 특수 교육 대상자 특별 전형'을 처음 도입하고, 논술 시험은 치르지 않기로 했다.

2002학년도 입시는 수시 모집으로 모집 정원의 30% 내외를 선발하였다. 전형 절차는 2001년 9월 3일에 지원서를 배부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가 나온 후 2001년 12월 5일 최종 합격자 발표로 끝났는데, 수시 모집 지원 자격은 크게 아래와 같이 네 가지 유형이 있었다.

- 모집 단위가 인정하는 경시대회 입상자.
- 모집 단위가 인정하는 별도 자격 기준 해당자.
- 모집 단위가 지정하는 교과 성적 우수자(단, 고교 졸업 예정자에 한함).
- 기타 본교 입학고사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인정하는 자.
  - 국제 수준의 발명품 전시회 참가자(예: 스위스, 파리, 제네바 등).
  - 해외 거주 경험이 있는 자의 경우, 거주국 국가 수준의 수상 경력자(예: 미국 우수고등학생상).

모집 단위별 지원 자격 기준과 지원 자격 인정 경시대회는 각 모집 단위 특성에 맞게 세세하게 지정하였다. 그리고 교과 성적 우수자의 범위는 모집 단위에서 지정한 교과 성적의 평균 석차 백분율을 기준으로 해당 고교 내 계열별 석차가 인문 계열은 상위 2% 이내, 자연 과학 계열은 상위 3% 이내인 자로 규정하였는데, 인문 계열이라면 평균 석차 백분율은 다음과 같은 공식을 통해 산출하였다.

〈표 3-1-18〉 2002학년도 정시 모집 전형 요소별 배점

모집 단위	1단계 전형				2단계 전형				전형 총점		
	수능 영역	비교과 영역 <sup>*1</sup>	전형 총점	선발 인원	교과 영역	비교과 영역	면접 및 구술 고사	실기 고사		교직 적성·인성 검사	
인 문 대 학	292	B급 이상	292	472명 이내	120	50	30			200	
사 회 과 학 대 학	352	"	352	608명 이내	120	50	30			200	
자 연 과 학 대 학	232	"	232	402명 이내	100	50	50			200	
의 예 과	232	"	232	140명 이내	100	50	50			200	
치 의 예 과	232	"	232	72명 이내	100	50	50			200	
수 의 예 과	232	"	232	66명 이내	100	50	50			200	
간 호 대 학	232	"	232	108명 이내	120	50	30			200	
경 영 대 학	352	"	352	286명 이내	120	50	30			200	
공과대학	공학계	232	"	232	1,302명 이내	100	50	50			200
	건축학과 (건축학전공)	232	"	232	44명 이내	100	50	50			200
농업생명 과학대학	인문계	292	"	292	80명 이내	120	50	30			200
	자연계	232	"	232	454명 이내	120	50	30			200
	사범계	232	"	232	32명 이내	120	50	18		12	200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272	"	272	111명 이내	40	20	60 <sup>*2</sup>	80 <sup>*3</sup>		200
	동양화과	272	"	272	39명 이내	40	20	60 <sup>*2</sup>	80 <sup>*3</sup>		200
	서양화과	272	"	272	51명 이내	40	20	60 <sup>*2</sup>	80 <sup>*3</sup>		200
	조 소 과	272	"	272	51명 이내	40	20	60 <sup>*2</sup>	80 <sup>*3</sup>		200
법 과 대 학	292	"	292	290명 이내	120	50	30			200	
사범대학	어문교육계	292	"	292	128명 이내	120	50	18		12	200
	인문 사회 교 육 계	292	"	292	138명 이내	120	50	18		12	200
	수학· 과학 교 육 계	232	"	232	192명 이내	120	50	18		12	200
	체육교육과	280	"	280	80명 이내	100	30	18	40	12	200
생활과학	인문계	280	"	280	76명 이내	120	50	30			200
대 학	자연계	232	"	232	102명 이내	120	50	30			200
약 학 대 학	232	"	232	102명 이내	100	50	50			200	

비고: 1. \*1은 A, B, C 급으로 평가함.

2. \*2는 포트폴리오와 기초 실기 테스트를 평가 자료로 활용함.

3. \*3은 전공 적성 실기 테스트.

평균 석차 백분율 = (평균 석차/해당 과목 재적생 수) 이수 단위의 합/ 총 이수 단위

전형 방법은 먼저 1단계에서 모집 인원의 2~3배수를 뽑은 다음, 2단계 전형 과정을 거쳐 예비 합격자를 선발하였다. 그리고 수학능력시험 결과가 나오면 서울대학교에서 설정한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여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 내에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였다.

1단계 사정은 교과 영역과 비교과 영역을 합한 점수로 선발하였다. 교과 영역은 모집 단위별 지정 교과목의 전 과목 평균 석차 백분율을 산출하여 평가하였으며, 비교과 영역은 추천서, 자기소개서, 학교 생활 기록부(교과 영역 제외) 등을 통해 대인 관계, 봉사성, 내적 성숙성, 논리력, 창의력 등과 학업 관련 또는 학업 이외 수상 경력 등을(효행상 등) 평가하였다. 지정 교과목은 지정 필수 과목(모집 단위에 따라 국어, 영어, 수학, 공통 과학 등)과 지정 선택 과목(사회 교과, 제2 외국어 교과, 공통 과학 외 과학 교과, 체육 교과, 무용 교과 등)으로 구분되었다.

2단계 사정은 면접 및 구술 고사(사범대학은 교직 적성·인성 검사, 음악대학과 미술대학은 실기 고사를 병행) 점수로 평가하였고, 마지막 선발 자격인 최저 학력 기준은 수학능력시험 계열별 2등급 이내(사범대학 체육교육과는 3등급 이내, 음악대학은 적용하지 않음)로 하였다.

모집 정원의 70%를 선발한 정시 모집도 2단계 전형으로 이루어졌다(음악대학은 1·2단계 통합 전형). 1단계 사정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와 비교과 영역(추천서·자기소개서·학교 생활 기록부(교과영역 제외))을 A, B, C급으로 평가한 점수를 합하여 2~3배수를 선발하였고, 2단계 사정에서 학교 생활 기록부의 평균 석차 백분율을 점수화한 것에 비교과 영역 점수, 면접 및 구술고사 점수를 합하여 선발하였다(미술대학과 사범대학은 실기 고사 및 교직 적성 인성·검사 실시).

한편 이해 처음 실시한 농어촌 학생 및 특수 교육 대상자 특별 전형으로, 농어촌 학생과 특수 교육 대상자를 각각 100명과 20명 정원 외로 선발하였다. 그중 농어촌 학생 특별 전형의 지원 자격은 아래와 같았다.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농어촌 지역) 소재 학교(농어촌 학교)에서 중·고등학교 전 과정을 포함한 9년(18학기) 이상의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부모(사망, 실종, 이혼 또는 기타 본교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와 함께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중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5개 영역 종합 등급이 계열별 2등급 이내인 자(단, 음악대학 성악과,



기악과, 국악과는 4등급 이내인 자).

단, 농·수산계 고등학교는 행정 구역상 시 소재라도 농어촌 학교에 포함되고, 읍·면 소재 특수 목적고 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는 농어촌 학교에 포함되지 않음.

그런데 2002학년도 입시에서 사상 초유의 미등록률이 발생하여 학내외에 충격을 주었다. 이미 2000학년도와 2001학년도에 각각 71명과 60명의 미등록자가 발생하여 서울대학교의 위상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이 언론에 대서특필된 바 있는데, 2002학년도에는 입학 정원의 4%를 넘는 무려 167명의 미등록자가 발생한 것이다. 농업생명과학대학 미등록자가 91명(모집 정원의 23.1%)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 생활과학대학에서 16%인 21명, 공과대학에서 11명이 등록을 포기하였다. 2003학년도에는 미등록자가 96명으로 줄어들었다. 이해에는 약학대학과 간호대학의 미등록률이 가장 높았으며, 공과대학과 인문대학의 미등록 인원이 증가한 반면, 농업생명과학대학과 생활과학대학의 미등록률은 크게 줄었다. 이렇듯 서울대학교의 미등록자가 전에 없이 증가한 것은 1997년 외환 위기 사태 이후 고용 불안 증가에 따라 법과대학 의과대학 등 소위 인기학과에 대한 선호가 한층 심화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03학년도와 2004학년도의 입시는 2002학년도 입시와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 4) 지역 균형 선발 전형과 수시 모집 확대

정부의 '200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은 분명 기존 입시보다 훨씬 다채로운 전형 방식을 가능하게 하였고, 서울대학교는 2005학년도 수시 모집에서 지역 균형 선발 전형과 특기자 전형을 실시하는 등 더욱 다양한 전형 방식을 모색하였다.

지역 균형 선발 전형은 다소 불리한 교육 여건 속에서도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잠재력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구상되었는데, 특히 정운찬 총장이 이 제도를 시행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런데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이 제도는 정 총장이 2002년 7월 23일 '입시 정원의 지역별 할당'을 처음 언급한 이래, 학내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각계에서 찬반 양론이 분분하였다.

찬성하는 측은 그 근거로 ① 특정 지역과 계층에 교육 기회가 집중되는 현상 완화, ②

〈표 3-1-19〉 2005학년도 지역균형 선발전형의 전형 요소별 배점

모집 단위	1단계		2단계					최저 학력 기준
	교과 영역	선발 인원	1단계 성적	서류 평가	면접 및 구술 고사	교직 적성·인성 검사	전형 총점	
인문·자연계 (간호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법과대학 제외)	200	2배수 이내	200	25	25	-	250	수능 2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
간호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법과대학	200	3배수 이내						
사범대학	200	2배수 이내	200	25	15	10	250	

교육을 위한 이동 및 인구의 대도시 집중 현상 완화, ③ 지역 간 균형 발전 및 지역 활성화, ④ 사회 통합 등을 제시하였다. 반대하는 측은 ① 능력에 따른 교육의 원칙 훼손, ② 대도시 빈민층에 대한 역차별 가능성, ③ 지역 인재의 서울대학교 집중, ④ 기존 농어촌 학생 특별 전형과 중복 등을 이유로 들었다.

정부는 지역 균형 선발 전형에 대해 매우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였는데, 특히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정부 차원에서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히기까지 하였다. 결국 서울대학교는 2003년 4월 4일, 지역 균형 선발 및 특기자 전형, 논술 고사 부활을 특징으로 하는 '2005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기본 방향'을 발표하였고, 2004년 3월 30일 입시 전형 발표에서 이를 최종 관철하였다.

2005학년도 입시부터 입시 제도가 대폭 수정됨에 따라, 서울대학교는 2004년 5월 중순에서 6월 초에 걸쳐 광주, 대전, 부산, 대구, 서울 등을 돌며 고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입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지역 균형 선발 전형은 1단계에서 교과 영역으로 선발 인원의 2~3배를 선발하였으며,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에 서류 평가와 면접 및 구술 고사 성적을 더하여 선발하였다. 교과 영역 평가는 고교 3학년 1학기까지 전 과목을 반영하였고, 서류 평가는 학교 생활 기록부, 추천서, 자기소개서, 각종 증빙 서류를 가지고 생활 태도, 학업 태도, 학업 배정, 잠재력 등을 평가하였다. 물론 최종 합격하기 위해서는 최저 학력 기준인 수능 2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여야 했다.

〈표 3-1-20〉 2005학년도 정시모집 전형 요소별 배점

모집 단위	1단계				2단계				전형총점
	수능 영역	교과 영역	전형 총점	선발 인원	1단계 성적	면접 및 구술 고사	논술 고사	실기 고사	
인문계	100	100	200	2배수 이내	200	25	25	-	250
자연계	100	100	200	2배수 이내	200	50	-	-	250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100	100	200	2배수 이내	200	100	-	200	500

특기자 전형은 기존의 일률적인 교과 영역과 비교과 영역 평가 방법으로는 전형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시행한 제도이다. 1단계 서류 평가에서 지원자의 제출 서류(학교 생활 기록부, 추천서, 자기소개서, 각종 증빙 서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는데, 이때 지원자의 자질과 재능에 초점을 맞추되, 교과 성적, 비교과 영역(지도성, 공동체 의식, 봉사성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그런 다음 2단계에서 모집 단위 계열의 특성에 따라 논술 고사와 면접 및 구술 고사를 실시하였다.

지원 자격은 모집 단위별로 정하였다. 자연 과학 계열의 경우 각종 수학, 과학, 컴퓨터·정보 올림피아드 및 경시대회 입상자를, 미술대학은 전공 분야와 관련된 소양과 특기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학교장이 추천한 자나 예술고 성적 우수자를, 음악대학은 각종 콩쿨 입상자를, 체육교육과는 전국 규모 대회나 무용 콩쿨 수상자로 한정하였다. 인문 계열의 경우 논술 문학 분야(전국 규모 문학상 수상자, 신문 문예 입상자, 작품 출판 실적이 있는 자), 외국어 분야(텡스(TEPS) 850점 이상, 토플(TOEFL) CBT 253점 이상 취득자, 제2 외국어 공인 시험 성적 제출자), 수학·과학·정보 분야(국제·국내 올림피아드 수상자), 봉사·사회 활동 분야(교내·외 활동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했거나 봉사 실적이 탁월한 자)로 나누어 자격을 정하였다.

2005학년도 정시 모집은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한다는 의미에서 2004학년도 입시와 달리 1단계 전형부터 교과 영역을 50% 반영한 것이 특징이었다. 2005학년도 수시 및 정시 모집의 전형 종류별 모집 인원 비율은 〈표 3-1-21〉과 같다.

처음 도입된 지역 균형 선발 전형은 시행 첫해부터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다. 이해 수시 모집에 지원한 군 소재 고등학교의 수는 전년에 비해 늘어난 반면, 서울 지역과 광역

〈표 3-1-21〉 2005학년도 수시 및 정시 모집 일반전형 모집인원 비율

(단위: %)

모집 단위	수시 모집			정시 모집
	지역 균형 선발 전형	특기자 전형	소계	
인문대학	40	-	40	60
사회과학대학	20	10	30	70
자연과학대학	20	20	40	60
의예과	20	10	30	70
수의예과	20	10	30	70
간호대학	25	5	30	70
경영대학	20	5	25	75
공과대학	20	20	40	60
농업생명과학대학	20	10	30	70
미술대학	-	30	30	70
법과대학	20	10	30	70
사범대학	20	10	30	70
생활과학대학	30	-	30	70
약학대학	20	15	35	65
음악대학	-	22	22	78

시, 중·소 도시 지역의 지원 학생 수는 2,200여 명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총 70개 군에서 117개 고등학교(군 소재 고등학교의 27.3%)가 지원해, 전해보다 35개 군, 49개 고교가 증가하였다. 2004학년도에 전국적으로 7.5%를 차지하는 군 지역의 고3 학생 가운데 서울대학교에 합격한 학생은 1.6%였다. 그러나 2005학년도에는 군 지역의 고3 학생 비율이 6.7%로 감소했음에도 군 지역 합격자는 7.4%로 증가하였다.

이후 2005학년도 전형별 입학생의 성취도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지역 균형 선발 출신 학생들의 성적이 정시 모집 전형 출신보다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 균형 선발 출신 학생들의 성적이 낮을 것이라는 당초 오해를 불식시켰다.

또 2005학년도 지역 균형 선발 전형과 특기자 전형 합격생들은 영어와 수학 등 기초 학력이 전해에 비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수시 모집 통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였음을 증명하였다. 이러한 성공에 힘입어, 서울대학교는 2006



그림 3-1-10 체육관에서 행해진 2006학년도 입학식 광경

학년도 입시에서 수시 모집 선발 비율은 33.6%에서 38.3%로 늘리고, 정시 모집 선발 비율은 66.4%에서 61.7%로 줄였다. 그 외 2006학년도 입학 전형의 기본 체제는 2005학년도의 것을 유지하였다.

현재 서울대학교는 2008학년도까지 수시 모집 비율을 정원의 약 60%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그 과정으로 2007학년도 입시에서 정원의 50% 가량을 수시 모집으로 선발하기로 하였다.

### 5) 재외 국민 특례 입학제와 정원 외 입학제도

1990년대 들어 국제화 세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해외로 진출하는 한국인들이 대폭 증가하였다. 그와 함께 재외 국민 특례 입학제를 둘러싼 형평성 시비도 끊이지 않았다.

서울대학교는 1994학년도 입시부터 재외 국민 특례 입학 전형의 선발 방식을 보다 까다롭게 하였다. 교포 자녀 전형의 지원 자격을 해외에서 ‘중·고등학교 과정을 5년 이상 수학한 자’에서 ‘중·고등학교 전 과정을 수학한 자나 9년 이상을 수학한 자’로 강화하고, 모집 인원도 30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대폭 줄였다. 이는 일부 부유층이 재외 국민 특례 입학제를 악용, 위장 이민 등을 통해 자녀를 불법 입학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그 결과 1994학년도에 교포 자녀 모집의 입학생 수가 대폭 감소하였는데, 이전에 두 자리를 유지하던 합격자 수가 4명까지 떨어졌다.

서울대학교는 1997학년도 입시부터 이전까지 공무원이나 상사 직원 자녀로 한정했던 외국 근무 재외 국민 자녀 전형의 지원 자격을 모든 재외 국민 자녀에게로 개방하였다. 즉, 현지법인 근무자, 자영업자, 연수·유학자, 장기 출장자 등의 자녀도 지원할 수 있게 하였다. 또 1998학년도부터 재외 국민 특례 입학의 모집 정원을 늘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2000년에 또다시 재외 국민 특별 전형제를 악용한 대규모 부정 입학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 문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대학교는 2002학년도 입시부터 외국 근무 재외 국민 자녀 전형의 지원 자격을 대폭 강화하여 외국에서의 수학 기간을 종전의 2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한편 서울대학교는 2005학년도 입시부터 재외 국민 특별 전형에서 북한 이탈 주민 전형을 실시하고 있다. 지원 자격은 최근 5년 이내 입국한 탈북자 가운데 국내 고등학교

〈표 3-1-22〉 정원 외 입학 현황(1993~2005년)

(단위: 명)

구분	연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농어촌 학생											87	88	92	77
특수 교육 대상자											7	8	10	8
학사 편입학		45	63	62	64	56	73	78	79	90	111	96	180	138
외국 근무 재외 국민 자녀		9	20	20	20	20	30	30	30	29	29	36	39	31
교포 자녀		20	4	8	3	5	34	50	59	77	76	62	49	50
군 위탁		22	19	7	6	7	8	12	16	13	8	11	6	12
외국인		14	17	10	17	25	34	18	2	36	77	39	38	31
총계		110	123	107	110	113	179	188	186	245	395	340	414	347

출전: 『통계연보』

재학 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 지원 가능하다. 실제 이해 입시 결과 사상 처음으로 탈락자 출신 학생이 응용화학부에 합격하여 화제가 되었다.

2006학년도 현재 서울대학교의 정원 외 특별 전형은 모두 세 종류로 외국 근무 재외 국민(공무원, 상사 주재원 등)의 자녀 전형과 외국 영주 재외 국민(교포 등)의 자녀 전형,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 전형이 있다. 전형 방식은 1단계에서 영어 능력 시험 성적표를 비롯한 서류 심사와 함께 논술 수학 과목 시험을 보고, 2단계에서 면접 및 구술 고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2006학년도 입시에서는 외국 근무 재외 국민 자녀 전형의 지원 자격을 완화하여 해외 수학 기간을 5년에서 4년으로 줄였다.

그런데 2005년 4월, 입학관리본부가 재외 국민 특별 전형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 안의 요지는 2008학년도 입시부터 국내 처음으로 정원 외 모집인 재외 국민 특별 전형을 폐지하고, 대신 수시 모집 특기자 전형에서 외국어 능력을 고려하여 정원 내로 선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는 그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특혜 시비를 종식시키고, 재외 국민과 일반 수험생들이 동등하게 경쟁하게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재외국민동문회가 이는 재외 국민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시행 여부가 주목된다.

그 외 정원 외 입학 제도의 변화로는 2001학년도부터 서울대학교 학생들로만 제한했던 학사편 입학 자격을 타교 출신자에게도 개방하여 학사 편입 학생의 수가 대폭 늘어

난 것을 들 수 있다.

## 6) 대학원 정원 감축과 후기 모집 실시

### (1) 정원 미달 사태와 정원 재조정

서울대학교는 1980년대 중반, 대학원 중심 대학, 연구 중심 대학을 표방한 이래, 줄곧 학사과정 정원 축소와 대학원과정 정원 확대를 지향하였다. 그러나 대학원과정 정원은 1980년대 후반 완만히 증가하다가 1990년대 들어 다소 정체되었다. 그러다가 1997학년도부터 다시 눈에 띄게 증가하였는데, 특히 이해 석사과정 입학생 수가 1996학년도보다 288명이나 늘어 사상 처음으로 3,000명을 넘었다. 2002학년도에 3,229명에서 3,896명으로 다시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박사과정 입학생 수도 2000학년도에 1,120명에서 1,435명으로 크게 늘었다. 박사과정 정원 증가는 김대중 정부가 연구 중심 대학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원을 대폭 늘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2001학년도 대학원 정시 모집에서 박사과정 지원자가 큰 폭으로 줄어들고 초



그림 3-1-11 대학원 과정 정원(입학생 기준) 증감 추이(1980~2006년). 출전: 1985년 이전은 「50년사」, 1986년 이후는 「통계연보」를 참고하여 작성. 비교: 2006년은 후기 모집 미포함.

〈표 3-1-23〉 2001학년도 박사과정 입학 경쟁률

모집단위	경쟁률
인문대학	0.65:1
사회과학대학	0.46:1
자연과학대학	0.84:1
공과대학	0.87:1
농업생명과학대학	0.71:1
약학대학	0.81:1
천연물과학연구소	0.63:1

출전: 『대학신문』 2000년 11월 20일자.

유의 미달 사태가 발생하여, 학내외의 주목을 받았다. 사회과학대학이 56명 정원에 26명, 인문대학이 84명 정원에 55명, 공과대학이 220명 정원에 192명이 지원하는 등 전체 경쟁률이 1.01:1로 예년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1998년 1.40:1, 1999년 1.50:1, 2000년 1.46:1).

이에 대해 대학원 지원 자격의 영어 성적으로 일정 점수 이상의 토픽 성적을 요구해 타 대 출신 지원자가 많이 줄었다거나, 경기가 나아져 유학 가는 사람 수가 예년 수준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라는 등 별로 대수롭지 않게 보는 견해들도 있었다. 그러나 박사 실업자 증가와 열악한 교육 환경을 그 근본 이유로 들며, 차제에 그간 서울대학교와 정부가 추진해 온 대학원 중심 대학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박사과정 지원자의 정원 미달 현상은 2002학년도에도 계속되어, 이해 박사과정 전기 모집은 899명 정원에 799명 지원해 사상 처음으로 전체 정원에 미달했으며(0.89:1), 후기 모집은 562명 정원에 445명이 지원하여 0.79:1을 기록하였다. 2003학년도 박사과정 입시는 전기 모집의 경쟁률이 0.85:1이었으며, 후기 모집은 0.78:1이었다. 더구나 2003학년도 대학원 전기 모집에서 석사과정 합격생 중 239명이(7.55%), 박사과정 합격생 중 62명이(7.74%) 등록을 포기하는 등, 낮은 지원률에다 미등록률까지 높아져 대학원의 충원률은 더욱 낮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2002년 7월 정운찬 총장 취임 후 대학원 정원 조정을 위한 본격적이고 가시적인 조치가 이루어졌다. 같은 해 11월 14일 본부는 2003학년도 박사과정 입학 정원을 37명 줄이고, 그 대신 석사과정 정원을 동수만큼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석사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박사보다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무리하게 늘어났던 박사과정 정원을 단과대학별로 조정하고 석사



과정 정원을 현실화했을 뿐 대학원 중심 대학이라는 틀은 변함없다”고 하였다. 또 박사 과정 진학 시 석사과정과 동일한 전공에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고, 영어 성적도 토플만 인정하던 것에서 토플도 인정하는 등 박사과정 지원자를 늘리기 위한 여러 유인책을 강구하였다. 정 총장은 2003년 7월 『대학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서울대학교가 대학원 중심 대학을 표방하면서 질적 성장 없이 양적으로만 팽창하였다. 대학원 정원을 크게 줄여야 한다. 양보다는 질 중심으로 대학원을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원은 2004학년도에 102명을, 2005학년도에 12명을 줄였고, 2006학년도에 705명을 대폭 감축하였다. 대학원 정원 감축은 내실 있는 인재 양성과 교육·연구 환경의 질 향상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

## (2) 후기 모집과 석사·박사·통합 과정 실시

서울대학교는 1998학년도부터 8월 중에 특차 모집을 실시하였다. 이 제도는 입시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우수한 학생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하였다. 특차 모집은 모집 단위별로 전체 정원의 50% 이내에서 선발하였으며, 전공과목 필기시험이 면제되고 면접 및 구술 고사와 서류 심사만으로 합격자를 선발하였다. 이에 따라 비슷한 목적과 전형 방식으로 1991학년도부터 시행한 석·박사 연계 과정 제도는 폐지되었다. 특차 전형 합격자 수는 <표 3-1-24>와 같다.

그런데 이 특차 모집 제도도 후기 모집을 실시하게 됨에 따라 2001학년도를 마지막으로 폐지되었다. 2001학년도부터 시행된 후기 모집은 8월 졸업자들의 학업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이다. 이전에는 대학원 진학이 3월에만 가능했기 때문에, 이들은 한 학기동안 학업을 중단해야만 했다. 후기 모집 정원은 총 대학원 입학 정원 15% 내외로 정하며, 전형 요소 및 배점은 단과대학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전기 모집과 거의 같은 내용으로 실시하고 있다. 영어, 전공 필답 고사, 면접 및 구술 고사, 서류 심사, 제2 외국어, 실기 고사 등이 주요 전형 요소이다.

한편 서울대학교는 2000학년도부터 석사·박사 통합 과정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표 3-1-24> 대학원 특차 모집 연도별 합격자 수(1998~2001)

(단위: 명)

구분	연도	1998학년도	1999학년도	2000학년도	2001학년도
석사과정		910	1,021	1,050	1,013
박사과정		300	328	369	389

〈표 3-1-25〉 2007학년도 석사·박사 통합 과정 전형 요소 및 배점

대학	재학 중 성적	서류 심사	면접 및 구술 고사	비고(총점)
인문대학	50		50	100
사회과학대학	50		50	100
자연과학대학	40		60	100
경영대학	30	70	등급화	100
공과대학	50		50	100
농업생명과학대학	30	20	50	100
사범대학	50	50		100
생활과학대학	30	30	40	100
수의과대학	80	-	20	100
약학대학	20	-	80	100
의과대학	-	50	50	100
치과대학	50		50	100

는 박사학위를 최종 목표로 하는 학생이 석사논문 작성이나 박사과정 입학시험 준비 등으로 연구의 연속성이 저해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서울대학교 석사과정 재학자(정원 외 입학자 포함)로서 2개 학기 이상 이수자 중 재학 중 성적 및 일정 기준 해당자를 박사과정 정원 70% 이내에서 선발하는데, 일반적으로 자연 과학·공학·의학 계열 모집 단위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다. 참고로 2007학년도 전기 석사·박사 통합 과정 선발의 모집 정원은 363명이며, 전형 요소 및 배점은 〈표 3-1-25〉와 같다.



## 제2장 교육 단위의 개편

본 장은 각 단대, 학과(부) 등 교육 기구 편제와 계열별 모집, 광역화 모집 등 모집단위의 변화를 다룬다. 엄밀히 보면 이 둘은 서로 다른 차원의 개념이다. 교육 기구의 신설·폐지 그리고 개편은 그에 조응하는 학문연구 영역의 분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데 반해, 모집 단위는 학생들 선발하는 기술적 문제에 가깝다. 그러나 이 둘은 기본적으로 학생들을 편제하여 교육하는 단위라는 공통점이 있기에 함께 서술하고 교육 단위라 칭하였다.

개교 이후 50년 간의 역사는 기본적으로 기존 교사를 요약·정리하고 재배치하되, 새로 나온 각 단대사 및 학과(부)사를 참조하여 새로 첨가하거나 교정한 부분이 많다. 최근 10년사는 대학교육협회가 발간한 연구보고서와 자료집, 잡지 『대학교육』과 대학본부의 각종 연구보고서 및 『대학신문』을 많이 활용하였다. 참고로, 교육 기구의 신설 및 폐지 그리고 명칭 변경의 시기는 주로 설치령, 학칙 등 법적 변화 시기를 기준으로 하였다.

## 제1절 개교와 ‘연립적 종합대학교’ (1946~1961년)

### 1) 개교 당시 교육 기구

1946년 7월 13일 미군정청 문교부는 ‘국립서울대학교설립안’(이하 국대안)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국대안은 경성제국대학 후신인 경성대학과 일제 식민지기에 설립된 각종 관립전문학교(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는 사립)를 통합하여 종합대학교인 국립서울대학교를 창설한다는 내용이었다. 문교부는 국립서울대학교 설치 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었다.

식민지 시대의 고등 교육 기관은 일본이 우리 나라를 예속화하려는 식민지 정책의 잔재요, 우리 민족을 위한 교육 기구가 아니다. 그것은 일관한 교육적 안이나 계획이 없이, 조선의 진정한 복리를 무시하고 그때그때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 만든 산물에 불과하다. 거기에는 쓸데없는 중복과 경쟁이 있어 국가 재정을 낭비한 흔적이 심하고, 나아가 적은 독립한 기관들이 각기 소왕국을 형성하고 균용할거하여 피차간에 아무런 연락도 협조도 없음을 알았다.

즉, 식민 잔재 청산과 함께 배타적 학교 운영에서 기인하는 여러 문제점 제거를 그 이유로 내세웠다. 그리고 문교부장 유억겸은 국립 종합대학교의 장점을 다음과 같이 들었다. 첫째, 각 학교의 기존 건물과 설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유능한 교수의 상호 교류와 교수의 연구 시간을 늘릴 수 있다. 셋째, 국가 재정이 이중, 삼중으로 분리되는 것을 줄일 수 있다. 넷째, 다른 학교의 장점을 누구나 받을 수 있어, 유능한 인재와 학자를 양성할 수 있다.

그런데 이날 문교부장 유억겸은 “일반은 이번 조처를 합병으로 오해 말고 일정시대의 것은 전적으로 폐지하고 새로이 종합대학교를 세워 각 분과의 대학을 두는 것으로 알아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이 말은 그가 각 관립학교가 통합에 반대할 것이란 충분히 예상했음을 암시한다. 이는 1946년 4월 문교부가 시범적으로 경성대학 의학부와 경성의학전문학교의 통합을 지시했을 때, 두 학교 모두 통합안에 반대할 적이 있기 때문이었다. 이때 경성대학 측은 경성의학전문대학 학생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자기들의 격을 저하시키는 일이라 주장했고, 경성의학전문대학 측도 장구한 역사를 가진 학교

를 없앨 수 없다고 반대하였다.

실제 문교부가 국대안을 발표하자 이에 대한 여론이 분분한 가운데 일부 교직원과 학생들은 격렬한 반대 운동을 펴기 시작했다(이에 대해서는 제5부 학생의 3장 1절 참조). 국대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였다. 몇몇 관료가 일방적으로 국대안을 만들었다는 점, 일본 제국주의가 창설한 경성제국대학을 모체로 한다는 점, 관선 이사회를 두어 학원 자치권을 박탈한다는 점, 그리고 대학교수와 학생들 중 좌익 세력을 제거하고자 하는 미군정의 정치적 목적이 개입되었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이와 더불어 경성대학과 경성의학전문대학의 통합 반대처럼 기존 체제를 변동하는 것에 대한 반발감도 분명 존재하였다.

그런 와중에 문교부는 8월 22일, 미군정청 법령 제102호로 ‘국립서울대학교설립에관한법령’을 공포하여 국대안 내용을 관철하였다. 이로써 국립서울대학교가 창설되었고, 당시 서울대학교의 교육 기구도 이 법령에 근거하여 편제되었다. 이 법령 제5조에 따라 경성경제전문학교, 경성치과전문학교, 경성법학전문학교, 경성의학전문학교, 경성광산전문학교, 경성사범학교, 경성공업전문학교, 경성대학, 경성여자사범학교, 수원농촌전문학교를 국립서울대학교에 흡수·폐지하고, 제6조에 의거 농림과대학, 상과대학, 치과대학, 사범대학, 공과대학, 예술대학, 법과대학, 문리과대학, 의과대학, 대학원 등 9개의 대학과 1개의 대학원을 설치하였다.

창립 초기 각 대학 및 대학원의 상황과 그 연혁은 아래와 같다.

#### 문리과대학

경성대학 법문학부 문과 계통과 이공학부 이과 계통을 통합하여 발족하였다. 문학부와 이학부 체제로 문학부에는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독어독문학과, 불어불문학과, 중국어중국문학과, 언어학과, 사학과, 사회학과, 종교학과, 철학과, 심리학과, 정치학과 등 12개 학과가, 이학부에는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지질학과, 생물학과 등 5개 학과가 있었다. 예과가 폐지됨에 따라 1948년 9월 의예과부를 편입하였으며, 1949년 9월에는 문리과대학 부설 이과중등교원양성소(理科中等教員養成所)를 개설하여 2년 교육 후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부여하였다. 이 양성소는 1957년 3월 폐지될 때까지 모두 403명의 중등 교원을 배출하여 사범대학과 더불어 중등 교원 양성에 일익을 담당하였다.

### 공과대학

경성대학 이공학부 공과 계통과 경성공업전문학교, 경성광산전문학교를 통합하여 출범하였다. 경성공업전문학교는 1916년 4월에 조선총독부가 설립하였는데, 1922년 3월에 경성고등공업학교로 개편하였다가 1944년 4월 경성공업전문학교로 환원되었다. 경성광산전문학교는 1939년 4월에 조선총독부가 경성고등공업학교의 광산학과를 분리하여 설립한 학교이다.

출범 당시 건축공학과, 기계공학과, 섬유공학과, 야금학과, 전기공학과, 항공조선학과, 채광학과, 토목공학과, 화학공학과 등 9개 학과가 있었으며, 1947년 7월에 전기공학과와 전기 통신 분야를 분리, 전기통신공학과를 신설하여 10개 학과로 늘어났다. 1948년에 야금학과를 금속공학과로, 전기통신공학과를 통신공학과로 개칭하였다.

### 농림과대학

수원농림전문학교를 개편하여 출범하였다. 수원농림전문학교의 시초는 1904년에 대한제국 정부가 실업 교육을 위해 설립한 농상공학교(農商工學校)이다. 1906년 8월, 실업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농과, 상과, 공과를 분리하였는데, 이때 농과는 농림학교(農林學校)로 바뀌었다. 1907년 1월 8일, 수원에 교사를 신축하여 이전하였다. 일제 강점 후 1910년 10월에 권업모범장(勸業模範場)에 부속되었으나, 1918년에 다시 독립하여 수원농림전문학교로 승격하였다. 1922년에 수원고등농림학교로, 1944년에 수원농림전문학교로 개칭하였다가 해방을 맞았다. 개교 당시 농학과, 임학과, 농공학과, 수의학과, 농화학, 농생물학과, 농경제학과 등 총 7개 학과가 있었다.

### 법과대학

경성대학 법문학부 법과 계통과 경성법학전문학교를 통합하여 출범하였다. 경성법학전문학교의 시초는 1895년에 조선 정부가 세운 최초의 국립 법학 교육 기관인 법관양성소이다. 1908년 이를 법학교로 개편하였고, 한일합방 후 1911년에 경성전수학교(京城專修學校)로 개명하였다가 1923년에 경성법학전문학교가 되었다. 한편 1924년에 설립된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는 해방 후 미군정 하에서 경성대학 법문학부로 개편되었다. 그리고 경성대학 법문학부와 경성법학전문학교는 1946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창건의 모태가 되었다. 법과대학은 개교 초기 법학과 단일 학과였으나, 1948년 가을 행정과가 분리·독립하여 2개 학과 체제가 되었다.

### 사범대학

경성사범학교와 경성여자사범학교를 통합하여 출범하였다. 교육사적 관점에서 사범대학의 시초는 1895년에 조선 정부가 설립한 한성사범학교라 할 수 있다. 한성사범학교는 우리 나라에 세워진 최초의 교사 양성 기관으로 일본 침략 후 1910년에 폐교되고, 1921년에 조선총독부가 세운 경성사범학교가 그 맥을 이었다. 한편 경성여자사범학교는 1914년 4월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에 설치된 사범과를 연원으로 한다. 1943년에 경성사범학교와 경성여자사범학교를 함께 전문학교로 승격하였다. 사범대학 창립 당시 학과는 교육과, 국문과, 영문과, 사회생활과, 수학과, 물리화학과, 생물과, 가정과, 체육과 등 9개 과였다. 1950학년도에 사회생활과가 사회과, 역사과, 지리과 3과로, 물리화학과가 물리과와 화학과로 나뉘어 총 12개 과가 되었다.

### 상과대학

경성경제전문학교를 개편하여 출범하였다. 경성경제전문학교의 전신은 1907년 10월에 재일본동양협회(在日本東洋協會)가 설립한 동양협회전문학교의 분교로, 당시 조선 어과 3학년을 경성분교에 파견하여 1년 간 수학케 하였다. 1915년, 교명을 동양협회 식민전문학교 경성분교로 바꾸었고, 1918년 4월에 동양협회 식민전문학교(植民專門學校)와 분리되어 동양협회 경성전문학교로 독립하였다. 1920년 5월, 교명을 사립경성고등 상업학교로 개칭하였다. 1922년 3월에 관립(官立)으로 이관되면서 또 교명을 경성고등 상업학교로 바꾸었다. 그 후 1944년에 경성경제전문학교로 개편하였다가 해방을 맞았다. 상과대학은 경제학과와 상학과 2개 학과로 시작하였다.

### 예술대학

예술대학은 음악부와 미술부로 나뉘어져 출발하였다.

음악부의 모체는 1945년 12월 25일에 미군정청 학무국의 전문학교령에 따라 설립한 경성음악학교로, 설립자는 현제명이었다. 예술대학은 개교 당시 관악과, 악기과, 성악과, 양금(피아노)과, 작곡과, 제금(바이올린)과, 사범과, 첼로과, 콘트라베이스과 등 모두 9개 학과가 있었는데, 특히 작곡과는 국내 최초로 설치한 것이었다. 그러나 사범과와 악기과는 한 해만 졸업생을 배출하고 폐지되는 등 학과 조직이나 정원이 매우 유동적이었다. 결국 1950년 경에 기악과, 성악과, 작곡과 등 3과로 통합하였다.

미술부는 애초 발족할 때 회화과, 조각과, 도안과 3개 학과를 두었으나, 실제 개강 때

는 회화과를 동양화과와 서양화과로 분리하였다. 1948년 미학과를 추가로 설치하였고, 1949년 11월엔 동양화과와 서양화과를 다시 회화과로 합하고, 도안과는 응용미술과로 개칭하였다.

### 의과대학

경성대학 의학부와 경성의학전문학교의 통합 개편으로 이루어졌다. 경성의학전문학교의 기원은 1899년 3월에 설립된 우리 나라 최초의 서양의학교육기관인 관립경성의학교에서 찾을 수 있다. 그 후 1907년 생겨난 대한의원은 광제원과 관립경성의학교를 흡수·통합하여, 병원 기능과 의학 교육 기능을 모두 담당하였다. 이때 관립경성의학교는 대한의원 교육부로 편입되었다. 1908년 1월에 대한의원 의육부(醫育部)로 개칭하였다가, 1909년 2월에 대한의원 의육부 부속학교로 개편하였다. 일본 침략 후 대한의원은 조선총독부의원으로 바뀌고, 부속 학교는 조선총독부의원 강습소가 되었다.

한편 1916년 4월 조선총독부는 전문학교 관제를 반포하여, 경성의학전문학교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조선총독부의원은 의원으로만 남게 하고, 교육에 관한 업무는 경성의학전문학교에 인계하였다. 경성대학 의학부는 법문학부와 함께 1926년 경성제국대학에서 출발하였다. 의학대학은 개교 당시 의학과 단일 학과 체제였다.

### 치과대학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를 개편하여 출범하였다.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의 연원은 1922년 4월, 우리 나라 최초의 치의학 교육 기관으로 개교한 경성치과의학교이다. 창설자는 진남포의 실업가 도미타 기사쿠(富田儀作)였다. 경성치과의학교는 1928년 10월에 학교 재단 법인으로 인가를 받았고, 이어 1929년 1월에 4년제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로 조선총독부의 인가를 받아 승격하였다. 치의학과 단일학과로 개교하였다.

### 대학원

대학 교육의 목적을 일층 심오하고 정치하게 추구하는 동시에 학술 연구의 지도 능력과 독창력을 함양하기 위해 설치하였다. 1947년 6월 현재 설치된 학과는 문과 계통 12개 학과, 이과 계통 20개 학과에 남학생 138명, 여학생 1명이었다. 구체적으로는 국어학, 국문학, 국사학, 동양사학, 영어학, 영문학, 철학, 정치학, 심리학, 윤리학, 교육학, 법학, 물리학, 화학, 수학, 섬유학, 전기학, 화학 공학, 그리고 생리학 등의 의학계 15개 학과였다.



이렇듯 서울대학교는 국내 최초의 종합대학교로서 야심차게 출범하였다. 그러나 발족 당시 서울대학교는 각기 다른 역사와 전통을 지니며 지리적으로도 분산된 각종 교육 기관들을 단지 행정적 수단으로 통합한 것에 불과했다. 따라서 체계적이며 일관성 있는 종합대학교 체제에 훨씬 못미치는 단과대학들의 연합체와 같은 연립대학교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즉 이때의 서울대학교는 종합대학교로서 분명 한계를 갖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명실상부한 종합대학교의 모습은 1975년 종합화 이후에야 가능하였다.

## 2) 전시연합대학과 국립학교설치령 제정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발발로 모든 업무를 일시 중단하였던 서울대학교는 9월 28일 서울 수복과 함께 복구 사업에 진력하였다. 그리고 수복 직후인 9월 30일, 사립 서울약학대학을 편입함으로써 모두 10개의 단과대학을 거느리게 되었다.

약학대학의 출발은 서양 약을 취급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1915년에 설립된 조선약학강습소이다. 조선약학강습소는 1918년 2년제 정규 약학 교육 기관인 조선약학교의 설립으로 이어졌고, 조선약학교는 1923년에 3년제로 발전하였다. 그리고 1930년, 일제의 전문학교령에 의해 경성약학전문학교로 바뀌었다. 해방 후 경성약학전문학교는 4년제 대학으로 승격되고 이름도 서울약학대학으로 개칭되었다. 그러나 경성약학전문학교의 재단이 일본인들에 의해 운영되던 사립 재단이었기에 이들이 떠난 후 재정난에 직면하였다. 더욱이 광복 후의 혼란기에 재단의 분규까지 겹쳐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다 1950년 서울대학교에 편입됨으로써 대학은 정상화되었다.

비록 온전한 체제는 아니었지만 전쟁의 와중에도 서울대학교는 교육 활동을 계속하였다. 1950년 11월 문교부 방침에 따라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서울 시내 여러 대학들이 전시연합대학 체제를 구성하였다. 대학들은 문학부, 이학부, 공학부, 법정경찰학부, 의학부, 약학부 등 6학부의 연합 강의를 공동으로 실시하였다. 학생은 모두 500명이었다. 그러나 다음해 1월 중공군의 참전으로 인해 서울의 전시연합대학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었다.

전시연합대학은 부산으로 남하한 후 2월 19일부터 연합 강의 형식의 수업을 계속하였다. 그러던 중 5월 4일 정부가 ‘대학교육에관한전시특별조치령’을 공포하였다. 이 법은 “전쟁으로 정상적인 수업을 실시할 수 없는 대학의 학생은 그 기간 중 다른 대학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고, 대학은 이를 허락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이미 여러 대학들이 실시하고 있던 전시연합대학 체제를 공식화한 것으로, 이 법령을 통해 전시연합대학은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다. 각 지방에 흩어져 있던 서울대학교 학생들도 부산, 대전, 전주, 광주 등지의 전시연합대학 혹은 타 대학에 등록하여 수업하였다.

부산의 전시연합대학에는 서울대학교를 비롯하여, 고려대학교, 국학대학교, 한국대학, 국민대학, 신흥대학, 단국대학, 세브란스의과대학, 숙명여자대학교, 서울여자의과대학 등 총 10개 학교가 참여하였으며, 문학부·이학부·의약학부·농수산학부·법정경상학부·수의학부·예술학부·체육과·가정과를 설치하였다.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운영되던 전시연합대학은 전세가 안정되고 가교사가 어느 정도 건축되어 각 대학이 독자적으로 수업을 실시할 만한 여건을 갖추게 되자, 1952년 3월 25일자로 해체되었다. 이후 각 지방에 있던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모두 부산에 모여 학업을 계속하였다.

전시연합대학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독창적인 체제로서, 전시 중에도 피난지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종전에 서울에 집중되었던 고등 교육을 일시적이거나 지방에 분산하는 효과를 가져와 지방에 대학이 설립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1952년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경북대학교 등 세 개 대학이 국립 종합대학교로 출범한 것도 전시연합대학의 영향이 컸다.

이러한 상황에서 1953년 4월 20일, 정부는 대통령령 제780호로 ‘국립학교설치령’을 공포하였다. 국립학교설치령은 서울대학교를 비롯해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경북대학교 등 전국 국립대학교의 명칭, 위치, 단과대학과 학부, 학과를 규정하였는데, 1970년 서울대학교만을 별도로 취급하는 ‘서울대학교설치령’이 제정될 때까지 서울대학교 교육 기구 편제의 법적 근거가 되었다.

국립학교설치령 제정과 함께 서울대학교 교육 기구 편제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예술대학의 미술부와 음악부를 각각 별도의 단과대학으로 승격 개편하여 미술대학과 음악대학을 창설하였으며, 농과대학 수의학부도 별도의 단과대학으로 분리되어 수의과대학으로 승격하였다. 이는 이전부터 서울대학교가 문교부에 요청하였던 것으로, 이로써 서울대학교엔 총 12개 단과대학이 속하게 되었다. 사범대학은 교육과가 교육학부로 개편되어, 교육학과 외에 교육심리학과 교육행정과가 증설되었고, 사범대학 영문과는 외국어과로, 역사과와 지리과는 사회과로 통합되었다. 또 예술대학에 속했던 미학과는 문리과대학으로 옮기기로 하였다. 그러나 미학과는 그 후로도 한동안 미술대학에 속해 있었고, 실제로는 1960년에야 옮겨졌다.

1956년 7월 14일에도 국립학교설치령을 개정하여 농과대학에 잡사학과를 추가로 신설하였고, 1953년에 통합하였던 사범대학의 사회과를 다시 일반사회과, 역사과, 지리과로 분리하였다.

보다 대대적인 개편은 1959년 1월 13일의 개정에 의해 이루어졌다. 먼저 많은 학과가 과명을 변경하였다. 공과대학의 통신공학과가 전자공학과로, 채광학과가 광산학과로 이름을 바꾸었다. 농과대학은 농예화학과를 농화학과로, 농업경제학과를 농경제학과로, 농업생물학과를 농생물학과로 바꾸었으며, 미술대학은 조각과를 조소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학과 신설도 많았는데, 10개 학과를 새로 설치하여 정원도 1,440명이나 증가하였다. 공과대학에 원자력공학과를, 문리과대학에 외교학과와 사회사업학과를 신설하였고, 생물학과를 식물학과와 동물학과로 분리하였다. 또 치의예과를 문리과대학에 새로 편제하였다. 그 외 사범대학에 지학과를, 상과대학에 무역학과를, 음악대학에 국악과를, 의과대학에도 간호학과를 새로 만들었다. 그리고 농과대학에 농가정학과를 신설하였다.

1959년의 설치령 개정 때는 또 국내 최초로 특수 대학원인 보건대학원과 행정대학원을 각각 법과대학과 의과대학 부속으로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설립 목적은 장차 행정기관과 보건 위생 사업에 종사할 인재를 양성·훈련하기 위해서였는데, 이들 특수 대학원이 설립되면서 기존의 대학원은 일반 대학원이라 불렀다.

행정대학원 신설은 1954년에 시작한 전후(戰後) 서울대학교 복구 사업인 ‘미네소타 프로젝트’와 깊은 관련이 있었다. 미국 원조 당국이 지원하고 미네소타대학이 주관한 이 계획은 의학, 농학, 공학과 더불어 행정학 분야에 대해 지원을 하였다. 본격적인 행정대학원 창설 논의는 1955년 한미합동경제위원회(OEC: the Office of the Economic Coordinator for Korea)가 한국에 대학원 수준의 행정학 교육 기관을 설립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한국 정부가 이에 동의함으로써 시작하였다. 이 둘은 곧 행정대학원을 서울대학교에 설치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고, 그에 대한 기술 협조는 미국 미네소타대학이 담당하도록 결정하였다. 1955년 3월, 한미합동경제위원회 측 인사들과 정부 및 서울대학교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행정대학원 창설을 위한 한미합동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이 위원회의 활동을 밑거름으로 1957년 행정대학원 창설을 위한 한미협정을 체결하였다. 1957~1958년에는 교수 후보자 19명이 미네소타대학에 유학하였다. 그중 9명이 이후 행정대학원의 교수가 되었다. 또 1959년 연초에는 미네소타대학의 교수들이 고문 교수로 내한하여 창설과 관련한 업무를 도와주었다. 행정대학원의 교육 대상자는 대학 졸업

자 중 일반 행정관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자, 공무원·군인으로서 행정에 관한 광범위한 훈련을 받고자 하는 자, 사업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사업체의 업무가 행정 기관과 계속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여 정부 제도에 대한 보다 깊은 지식을 습득하고자 하는 자들이었다. 수업 연한은 2년이었으며, 학과 수업은 대개 2~3학기 동안에 마치고, 나머지 기간에는 정부 각 기관, 기업체에서 3~9개월간 실무 실습을 한 뒤 거기서 얻은 경험과 자료를 바탕으로 논문을 작성하였다. 1961년에 최초로 81명이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보건대학원은 보건 관련 분야에서 지도적 역할을 담당할 전문 요원과 학문 연구를 담당할 보건 연구자의 양성, 그리고 보건학의 연구와 실천을 통한 국민 보건 향상으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창설되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은 국내 최초의 보건대학원으로서, 예방 의학의 발전을 위한 기초를 쌓는다는 데 의미가 있었다. 설립 당시엔 수업 연한을 1년을 하였다가, 1962학년도부터 2년으로 늘렸다. 1960년 8월 의과대학에서 분리·독립하였다.

1961년 2월 27일에도 국립학교설치령을 개정하여, 문리과대학에 고고인류학과를, 미술대학에 예술학과를 신설하였다. 국내 최초로 고고인류학과를 설치함으로써 고고학과 인류학이 대학을 기반으로 학문 영역으로 정착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상의 개편 내용을 포함하여 1961년 2월 현재 서울대학교 교육 기구의 현황을 표로 나타내면 <표 3-2-1>과 같다.

일반 대학원의 학과와 정원은 문교부 훈령으로 1953년 10월부터 시행한 '대학원규정'에 따랐다. 이 규정에 의하면 대학원의 학과는 그 대학교에 설치된 학과 종류에 한하며 대학원 정원은 학사 정원의 1/10을 초과할 수 없었다. 서울대학교는 이보다 정원을 더욱 감축하여 1/2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는데, 당시 사회도 아직 대학원 졸업자를 많이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서울대학교 대학원 신입생은 1951학년도에 41명, 1952년에 96명, 1953학년도는 131명에 불과했다. 1960년 현재 대학원은 10개 분야에 석사학위를 수여하였고, 다음과 같이 총 51학과에 석사과정을 설치하였다.

- 박사과정: 문학·철학·이학·경제학·법학·공학·농학·의학·약학·수의학 등 10개 분야
- 석사과정: 국어국문학·영어영문학·독어독문학·불어불문학·중어중문학·언어학·사회학·사학·정치학·철학·종교학·심리학·교육학·지리학·체육학·법학·행정학·상학·경제학·회화·조소·미학·수학·물리·화학·생물학·지질학·건축

〈표 3-2-1〉 1960년 2월 27일 현재, 학부 교육 기구

단과대학 (학과 수)	학부(학과 수)	학과
공과대학(11)		섬유공학과, 화학공학과, 토목공학과, 건축공학과,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기계공학과, 조선항공학과, 광산학과, 금속공학과, 원자력공학과
농과대학(9)		농학과, 임학과, 농공학과, 축산학과, 농화학과, 농경제학과, 농생물학과, 잠사학과, 농가정학과
문리과대학(25)	문학부(16)	국어국문학과, 중국어중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불어불문학과, 독어독문학과, 언어학과, 사학과, 철학과, 미학과, 종교학과, 정치학과, 외교학과, 지리학과, 심리학과, 사회학과, 사회사업학과
	이학부(9)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식물학과, 동물학과, 지질학과, 천문기상학과, 의예과, 치의예과
미술대학(3)		회화과, 조소과, 응용미술학과
법과대학(2)		법학과, 행정학과
사범대학(15)	교육학부(3)	교육과, 교육심리과, 교육행정과
	문학부(5)	국어과, 외국어과, 일반사회과, 역사과, 지리과
	이학부(7)	수학과, 물리과, 화학과, 생물과, 지학과, 가정과, 체육과
상과대학(3)		상학과, 경제학과, 무역학과
수의과대학(1)		수의학과
약학대학(1)		약학과
음악대학(4)		성악과, 작곡과, 기악과, 국악과
의과대학(2)		의학과, 간호학과
치과대학(1)		치의학과
총 12개 단과대학, 5개 학부, 75개 학과, 2개 예과		

공학 · 광산학 · 금속공학 · 전기공학 · 기계공학 · 조선항공학 · 토목공학 · 섬유공학 · 화학공학 · 농학 · 임학 · 농생물학 · 축산학 · 농화학 · 농경제학 · 농공학 · 의학 · 치의학 · 수의학 · 약학 · 가정학 · 응용미술 · 전자공학 · 음악 등 51개 학과

서울대학교는 한국전쟁 발발에도 불구하고 개교 이래 1950년대까지 줄곧 새로운 교육 기구가 증설되는 과정에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1960년대에도 계속되었다.

## 제2절 자연 과학 계열 학과와 특수 대학원 증설(1961~1974년)

### 1) 대학 정비 시책과 사범대학 축소

1961년 '5·16 쿠데타'를 통해 등장한 박정희 정권은 군정 기간 동안 사회 각 부분의 전면적인 재정비와 함께 권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강력한 통제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는 교육 분야도 마찬가지여서 군사 정권은 대학 정비를 위한 정책을 모색하였다. 대학 사회는 1950년대 중반 이후 양적으로 급속히 팽창하면서 각종 비리 등의 문제도 키우고 있었는데, '4·19 혁명' 이후 각종 학원 비리 문제가 터지면서 곳곳에서 학원 분규가 발생하였다. 그래서 대학 정비를 원하는 사회적 여론도 매우 고조된 상태였다. 이로써 해방 이후 1950년대까지 정부가 취했던 자유방임주의적이고 개방적인 대학 정책은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정부가 대학 정비의 주요 이유로 내세운 것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우리 나라는 전체 인구에 비해 대학생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 둘째, 대학 졸업생 중 많은 이들이 실업 상태에 있어 사회 불안을 야기한다. 셋째, 대학 교육은 국가 사회의 인력 수요에 적합하도록 실업 교육과 과학 기술 교육 위주가 되어야 한다. 넷째, 많은 사립대학이 기업화하여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다.

정부의 대학 정비 시책은 1961년 9월 1일에 법률 703호로 발표한 '교육에관한임시특별법'에 잘 드러난다. 이 법은 대학의 인사, 교수와 학생의 자치 활동, 입시 및 학위 수여 방식에 관해 직접적으로 간섭할 것을 표명하였다. 특히 3조 "학교, 학과, 정원 등의 정비" 항목에서 "문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교재건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학교 또는 학과의 폐합을 명하거나 학급 또는 학생 정원의 재조정을 명할 수 있다"라고 하여 학과 통폐합과 대학 인구 감축을 위한 대학 정비의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정부는 며칠 뒤인 9월 4일에 '국립대학정비절차'를 발표하였다. 그중 서울대학교와 관련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사범대학에는 가정과·체육과·생물과·일반사회과만을 남겨두고 나머지 학과들은 모두 폐지한다.
2. 수의과대학은 농과대학에 병합시킨다.

3. 문리과대학에 교육학과를 신설한다.
4. 상과대학에 경영학과를 신설한다.
5. 교육대학원을 신설한다.

이 안에 따르면 서울대학교는 교육대학원을 신설하는 대신 사범대학의 15개 과 중 5개 과만 남겨야 하고, 그나마 교육학과는 문리과대학으로 옮겨야 했다. 사범대학을 대폭 축소하려는 이 안이 발표되자 사범대학의 교수와 학생은 모두 격렬하게 반발하였다. 이에 대해 문교부도 사범대학장 윤태림 교수를 비롯한 세 명의 교수를 파면 조치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하였다(세 교수의 파면 조치는 이듬해 2월 소급 취소됨). 정부는 또 같은 달 29일, 전국 대학의 정원을 줄인다는 방침 하에 서울대학교의 정원도 대폭 감축하여 책정하였다. 대학원을 제외한 학생 정원을 12,700명에서 8,640명으로, 4,060명이나 줄인다는 내용이였다. 이공계는 별 변화가 없었고 주로 인문 사회계가 대폭 감축되었다. 법과대학 560명, 상과대학 500명, 문리과대학이 420명으로 많았고, 사범대학은 가장 많아 1,360명이나 줄었다.

정부는 국립대학정비절차에 대한 반대가 격렬하자, 그해 12월 9일 이를 수정한 ‘학교정비기준령’을 발표하였다. 이 안 역시 서울대학교와 관련해서는 아래와 같이 사범대학 축소가 특징이었으나, 구체적 내용은 국립대학정비절차와 다소 달랐다. 이 안은 실제 1962학년도부터 시행되었다.

1. 사범대학의 교육심리과·교육행정과·국어과·외국어과·일반사회과·역사과·지리과·수학과·물리과·화학·생물과 및 지학과 등 12과는 폐지하고, 과학과와 사회생활과를 신설한다.
2. 미술대학의 예술학과를 폐지한다.
3. 수의과대학은 농과대학 수의학과로 개편하여 수원으로 이전한다.
4. 상과대학에 경영학과를 신설하여 1962학년도부터 개강한다.

즉, 사범대학에 교육과, 가정과, 체육과 등 3개 과를 남기고, 과학과, 사회생활과 등 2개 과를 신설하였으며, 미술대학의 예술학과를 폐지하였다. 이때 정부는 서울대학교 정원을 280명 추가로 감축하였다. 한편 1961년 12월 4일 자로 교육에관한임시특별법이 발효하여 교육대학을 신설하기로 한 바, 서울사범학교가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으로 서울대학교에 편입되었다. 그리고 신입생 160명을 선발하여 다음해부터 수업을 시작하였다.

1961년 12월 정부가 대학 정비 시책을 최종 확정된 결과 전국적으로 147개 학과를 폐지하고 학생 정원을 25,510명 감축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군사 정부가 단시일에 비민주적, 졸속적, 강압적으로 추진한 대학 정비 시책은 허다한 문제점을 낳았고, 비판 여론이 비등하였다. 정원의 급격한 감축은 고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 기회를 대폭 줄였고, 이는 주로 등록금으로 대학을 운영하던 사립대학에도 치명적이었다. 더불어 대학 교원도 대량 해고되었고 지방 대학의 특성 학과들이 폐지되었다. 또 사범대학 축소로 중등 교사를 양성하고 배출하는 중추기관이 위축된 것도 큰 문제였다. 결국 정부는 1년 만에 대학 정비안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으며, 1962년 말에 학과 복구와 정원 증원을 다시 허용하였다.

서울대학교도 1962년 12월에 ‘국립학교설치령’이 개정됨에 따라 사범대학에 많은 과들이 복구되었다. 폐지되었던 국어과, 수학과, 외국어과를 이름을 조금 바꾸어 국어교육과, 수학교육과, 외국어교육과(영어·독어·불어 전공으로 세분)로 다시 설치하였고, 기존의 가정과, 체육과, 과학과, 사회생활과는 각각 가정교육과, 체육교육과, 과학교육과(지리·화학·생물·지학 전공으로 세분), 사회교육과(일반사회·역사·지리 전공으로 세분)로 개칭하였다.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은 설립 1년 만에 폐지하였다. 서울대학교의 학생 정원도 이후 서서히 증가하였는데, 1969학년도에 이르러서야 대학 정비 이전의 정원을 거의 회복하였다.

결국 1961년 쿠데타 이후부터 1963년 민정 이양 전까지 군사 정권이 시행한 대학 정비는 실패하고 말았다. 그러나 그들의 대학 정비 시책은 고등 교육에 대해 최초로 종합적인 검토를 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또 이를 통해 대학 교육의 질적 향상은 양적인 감축이나 국가 권력의 감독 강화 또는 강권적 조치만으로 이룰 수 없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 2) 근대화 추진과 자연 과학 계열 대학 확충

### (1) 자연 과학 계열 대학의 확충

1960년대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서울대학교에는 더욱 다양한 과들이 설치되었다. 또 가정대학이 신설되고 수의과대학이 일시 농과대학에 합병되었다가 다시 독립하는 등 단과대학 조직에도 변화가 있었다.



그중 무엇보다 기구 개편 및 확충이 가장 활발했던 곳은 공과대학을 중심으로 한 자연 과학 계열 대학이었다. 이는 1960년대 들어 전개된 박정희 정권의 '경제 개발 전략' 즉 공업화를 통한 근대화 추진 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경제 개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산업 구조, 특히 공업 구조의 고도화가 절실하게 필요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우수한 고급 기술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였는데, 정부의 정책에 호응하여 공과대학도 1964~1966년까지 학과 신설, 학사 정원과 교수 요원 대폭 증원, 건물 신축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과대학 확충 3개년 계획'을 시행하였다. 농과대학도 학과를 세분화하거나 신설하였고, 실험 실습 시설과 기자재를 도입하여 교육의 충실화를 도모하였다.

자연계 대학의 교육 단위 변화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1962년 12월, 공과대학에 공업교육과를, 농과대학에 농업교육과를 설치하여 이듬해 3월에 개강하였다. 이는 중등학교 실업계 교과 내용의 강화와 실업계 중등학교 육성 방안의 일환으로 취해진 조치였다. 1963년 12월에는 공과대학에 응용수학과, 응용물리학과, 응용화학과 등 이른바 응용 3과를 설치하였다. 응용수학과는 인문학, 사회 과학, 자연 과학 등 제 분야의 문제들을 수리적(數理的)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응용해석학·통계학·컴퓨터과학 등의 교육을 진흥하기 위해 신설하였다. 응용물리학과는 순수 물리학의 연구 성과를 공학 발달의 밑거름으로 삼기 위해서 설치하였고, 응용화학과는 화학 공업을 담당할 고급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공업 발전의 인적 토대를 제공하기 위해 신설하였다.

1967년 11월에는 공과대학의 조선항공공학과가 조선공학과와 항공공학과로 분리되었다. 조선공학과는 조선 공학 및 해양 공학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고급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항공공학과는 지구 대기권 안을 날아다니는 비행기와 우주 공간을 비행하는 우주 비행체에 관한 이론과 실험을 위해 신설되었다. 한편 문리과대학에도 우리나라 최초로 해양학과가 신설되어 바다에 관한 종합적인 탐구 여건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었다. 그리고 이때 원예학과와 식품가공학과를 농과대학에 신설하였다.

1968년 12월에는 공과대학에 생산기계공학과와 재료공학과를 신설하였다. 이 중 생산기계공학과는 1970년 12월에 산업공학과로 명칭을 바꾸고, 공학적인 지식과 과학적인 경영 방법으로 산업 및 공공 시스템의 계획과 설계를 수행하고 경영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주력하였다. 재료공학과는 본래 요업·금속·고분자·섬유 등 각종 공업 재료를 다루는 학과로 신설되었는데, 금속 고분자 섬유 분야를 다루는 다른 과가 있었으므로 1975년 2월에 요업공학과로 개편되었다.

1969년 12월에는 농과대학 임학과로부터 임산가공학과를 분리·신설하였고, 문리과 대학에 미생물학과를 신설하였다. 또 공과대학의 광산학과를 자원공학과로 명칭을 바꾸었다.

1970년대도 1972년 12월에 농과대학에 조경학과를 신설하였고, 1973년 3월 공과대학에 기계설계학과를 신설하였다. 이는 공학이 고도로 발달하고 연구 분야가 전문화·세분화함에 따라, 기계공학과와 설계·가공 분야를 독립시켜 새로 발족한 것이었다.

〈표 3-2-2〉에서 알 수 있듯이 1961학년도 공과대학의 총정원은 1,580명이었으나 이듬해 정부의 대학 정원 감축 정책에 따라 1,240명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1964학년도에는 공과대학 확충 3개년 계획에 의해 1,840명으로 증가하였으며, 1968학년도에도 계속적인 공업화 정책에 따라 2,400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이러한 추세는 그 이듬해에도 계속되어 무려 800명을 증원한 결과 총정원이 3,200명이나 되었다. 1961학년도와 1969학년도 사이 공과대학 총정원은 거의 두 배로 증원되었다. 이렇듯 1960년대 공과대학의 팽창은 두드러진 것이었다.

〈표 3-2-2〉 대학 정원 변동 상황(1961~1973년)

(단위: 명)

연도 단과대학	1961	1962	1964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공과대학	1,580	1,240	1,840	2,400	3,200	3,200	3,200	3,200	3,320
농과대학	1,200	1,040	1,200	1,280	1,280	1,280	1,360	1,440	1,560
문리과대학	2,660	2,100	2,100	2,220	2,340	2,420	2,460	2,460	2,500
미술대학	440	280	280	280	280	280	280	280	280
법과대학	1,200	640	640	640	640	640	640	640	640
사범대학	1,880	560	1,040	1,460	1,600	1,600	1,640	1,640	1,640
상과대학	1,280	760	760	780	780	780	780	780	780
약학대학	480	320	320	320	320	320	320	320	320
음악대학	500	340	480	480	480	480	480	480	520
의과대학	680	560	560	720	720	720	960	960	960
치과대학	48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가정대학	-	-	-	-	360	360	360	360	360
수의과대학	320	-	-	-	-	-	-	-	-
합계	12,700	8,240	9,620	10,980	12,400	12,480	12,880	12,960	13,280

출전: 서울대학교 40년사편찬위원회, 1986 『서울대학교 40년사』, 194쪽.

## (2) 인문·사회계 대학 개편

자연계 대학만큼은 아니었지만 인문·사회계 대학에도 변화가 있었다. 1961년 12월에 앞서 언급한 학교정비기준령에 따라 상과대학에 경영학과를 신설하여 비로소 경영학이 독립적인 학문 분야로 정립하였다. 이 조치는 1960년대를 전후하여 경영학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짐에 따라 종래 상업학 관계 강좌를 중심으로 마련된 교과 과정이 경영학 관계 중심으로 변화한 데 따른 것이었다. 1964년 11월에는 학칙 개정을 통해 법과대학 법학과와 행정학과의 통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1968년 12월에는 문리과대학 사학과가 국사학과, 동양사학과, 서양사학과로 분리됨으로써 각각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때 또 상과대학 상학과가 경영학과로 흡수·통합되었다. 1969년 12월에는 문리과대학의 종교학과와 미학과가 철학과로 통합되었다. 그런데 이는 행정적 편의를 위한 조치인데다, 서울대학교와 사전 협의 없이 문교부가 일방적으로 취한 조치였기에 해당 학과의 교수와 학생들은 강하게 반발하였다. 급기야 총장실 점거와 수업 거부까지 벌어졌는데, 결국 철학과 내에 철학, 종교학, 미학 등 3개 전공을 두는 것으로 사태는 일단락되었다.

## (3) 가정대학과 수의과대학 신설

1968년 12월 사범대학의 가정과가 가정대학으로 승격·독립하였다. 당시 우리 나라 가정생활 상태는 산업 발전 정도에 비해 뒤떨어져 있어 가정생활의 합리화 및 현대화를 위한 연구가 많이 필요하였다. 이를 위해 가정생활 실태의 완전한 파악과 과학적 연구 방법이 뒷받침되어야 했는데, 유능한 교사 양성을 목표로 한 사범대학 가정교육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다. 이에 가정과 교수들을 중심으로 가정대학 승격·독립이 추진되었다. 가정대학은 5개 학과의 개설을 신청하여 그중 가정관리학과, 식품영양학과, 의류학과 등 3개 학과만이 인가를 받아 개설하였다.

1974년 1월에는 수의과대학을 신설하고, 이와 함께 문리과대학에 수의예과를 설치하였다. 수의과대학은 개교 당시 농과대학의 수의축산과로 시작하였다가 1953년 수의과대학으로 독립 승격하였다. 그러나 1961년 12월 정부의 고등 교육 기구 간소화 방침에 따라 농과대학 수의학과로 다시 통합되었다. 그후 축산업의 급속한 발달로 우리나라에도 고도의 수의학 기술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정부는 선진국의 수의학 교육 제도를 참작하여 충실한 교육 내용을 갖춘 6년제 수의학대학을 발족할 것을 구상하였다. 이에 1974년 3월 1일자로 그동안 8개로 늘어난 전국의 농과대학 수의학과 신입생 모집을 모

두 중지하고,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내에 2년제 수의예과 과정을 신설하였다. 하지만 곧 6년제 수의학 교육은 우리의 현실여건에 비추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하였고, 결국 1976년에 2년제 수의예과 과정을 폐지하여 4년제로 하였다.

〈표 3-2-3〉 종합화 직전의 교육 단위 편제표

단과대학 (학과 수)	학부(학과 수)	학과
문리과대학(29)	문학부(17)	국어국문학과, 중국어중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불어불문학과, 독어독문학과, 언어학과, 국사학과, 동양사학과, 서양사학과, 철학과, 사회학과, 정치학과, 외교학과, 심리학과, 지리학과, 고고인류학과, 사회사업학과
	이학부(12)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식물학과, 동물학과, 천문기상학과, 해양학과, 지질학과, 미생물학과, 의예과, 치의예과, 수의예과
공과대학(19)		섬유공학과, 화학공학과, 토목공학과, 건축공학과, 전기공학과, 기계공학과, 전자공학과, 조선공학과, 항공공학과, 자원공학과, 금속공학과, 원자력공학과, 공업교육과, 응용수학과, 응용물리학과, 응용화학과, 산업공학과, 재료공학과, 기계설계학과
농과대학(14)		농학과, 임학과, 농공학과, 축산학과, 농화학과, 농업경제학과, 농생물학과, 잠사학과, 농가정학과, 농업교육과, 원예학과, 식품공학과, 임산기공학과, 조경학과
미술대학(3)		회화과, 조소과, 응용미술학과
법과대학(2)		법학과, 행정학과
사범대학(7)		교육학과, 국어교육과, 외국어교육과, 사회교육과, 수학교육과, 과학교육과, 체육교육과
상과대학(3)		경제학과, 경영학과, 무역학과
수의과대학(1)		수의학과
약학대학(2)		약학과, 제약학과
음악대학(4)		성악과, 작곡과, 기악과, 국악과
의과대학(2)		의학과, 간호학과
치과대학(1)		치의학과
가정대학(3)		가정관리학과, 식품영양학과, 의류학과
총 13개 단과대학, 2개 학부, 87개 학과, 3개 예과		

### 3) 특수대학원 증설

1960년대에는 특수 분야에 종사할 인재를 양성·훈련하기 위하여(서울대학교설치령 제5조), 직업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 대학원들을 잇달아 신설하고 기존의 특수 대학원들도 시설과 기능을 확충하였다.

1959년 개설 당시 법과대학에 속했던 행정대학원은 1961년 3월 학칙 개정으로 법과대학에서 완전히 분리·독립하였다. 또 1968년에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를 신설하여, 도시와 지역의 공간 계획에 대한 합리적 구성을 연구하였다. 보건대학원은 창설 당시 1년 과정에 40명 정원이던 것이 1962학년도부터 2년 과정으로 연장되고, 정원도 80명으로 늘었다. 1967년에는 야간부가 설치되고 정원이 140명으로 증가하였다.

그 외 신설된 특수대학원은 아래와 같다.

#### 사법대학원

1962년 2월, “사법시험령에 의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이론 및 실무를 지도함으로써 학식과 덕망을 갖춘 판사 검사 변호사를 양성한다”는 취지로 설립하였다. 당시 법학 교육은 교양 교육과 전문 교육의 사이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였는데, 사법대학원 설립으로 전문 교육에 역점을 두어 법조인을 양성하고 종래의 방만한 사법관 시보 교육을 법학 교육과 연결할 수 있었다. 학생 정원은 200명이었고 소정의 학업을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증을 교부하였다. 그중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논문이 통과된 자에게는 법학 석사학위를 수여하였다. 사법대학원은 1970년 8월에 사법연수원이 설치되면서 1971년 7월에 폐지되었다.

#### 교육대학원

1963년 4월, 교사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설립하였다. 종래에도 대학원 교육학과 석·박사과정을 통해 교육학 전공자를 배출하였지만, 교육대학원의 신설로 교육학 전공자 양산 체계를 갖추었다는 점에 교육사적 의의가 있다. 전공은 교육 행정, 교육 심리, 초등 교육, 국어 교육, 외국어 교육(영어·불어·독어), 사회 교육(일반 사회·역사·지리), 과학 교육(물리·화학·생물·지학), 수학 교육, 가정 교육, 체육 교육, 실업 교육(농업·상업·공업·가정), 예능 교육(음악·미술) 등 12개 전공을 개설하였다. 1968년 9월에는 각 전공 아래의 세부 전공을 전공으로 높여 총 23개

의 전공으로 개편하였다. 모집 정원은 처음엔 50명이었다가, 1968년부터 100명으로 늘리고, 주간과 야간으로 나누어 모집하였다. 그러나 실제 대부분의 수업이 야간에 행해졌고, 1975년 서울대학교 종합화에 따라 해체되었다.

#### 경영대학원

1965년 11월, “한국의 산업 부흥을 위한 인적 자원을 개발하고 건전한 학술 연구로써 경영학계의 중추적 기관으로 발전하고자” 하는 취지로 설립하였다. 1960년대 들어 한국 경제가 자립을 기반으로 한 근대화의 전환기를 맞이함에 따라 기업 혁신을 위한 유능한 인재를 양성할 필요가 고조되었고, 경영대학원은 이에 부응하여 설립되었다. 학과는 경영학과 하나였으나, 회계학, 생산 관리, 마케팅 관리, 인사 관리, 재무 관리, 국제 경영 등 6개의 전공 과정이 있었다. 모집 정원은 100명이었으며 수업은 주간과 야간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석사과정은 2년에 걸쳐 전 교과 과정을 수료하면 경영학 석사학위를 수여하였고, 실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실무자 위주의 연구생 과정에서는 수업 연한 1년의 과정을 이수하면 경영 진단사 자격을 부여하였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는 전공 분야는 정하지 않고, 최고 경영자로서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었다.

1975년 2월 서울대학교 종합화에 따라 경영대학의 대학원으로 통합·개편되었다.

#### 신문대학원

1967년 12월, 매스커뮤니케이션 및 그 인접 과학에 대한 이론을 연구하고 응용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설립되었다. 1963년에 설립된 신문연구소가 모태가 되었다. 그런데 신문대학원의 창설에는 정부의 정책적 의도가 강하게 작용하였다. 제3공화국은 출범 초기부터 언론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서울대학교에 신문연구소를 설치하고 언론이 정부의 목표에 부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언론계의 무관심과 현직 기자들의 저조한 참여 때문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고, 이에 정부는 신문대학원을 설립하고 석사학위를 수여함으로써 언론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했던 것이다.

학생 정원은 120명으로 매년 60명을 선발하였는데, 35명 정도는 저널리즘 및 공보 분야에 종사하는 자 중에 선발하였고, 나머지 25명은 전공에 상관없이 대학 졸업자 가운데 선발하였다. 교육 과정은 2년이었다. 서울대학교 종합화에 따라 1975년에 폐지하

였으며, 그 대신 사회과학대학에 신문학과를 신설하였다.

### 환경대학원

도시와 지역의 공간 계획과 개발, 생활 환경의 합리적 구성에 관한 학문을 깊이 연구하고 그것을 응용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1973년 1월에 설립되었다. 원래 환경학은 종합 과학 영역으로, 건축 공학, 토목 공학, 지리학, 경제학, 행정학 등 공학과 사회 과학의 여러 분야에서 관심을 가져왔다. 그러나 1970년을 기점으로 우리 나라가 농촌 인구보다 도시 인구가 많은 사회로 전환함에 따라, 도시 및 지역 계획과 조경 분야 전반을 포괄하는 학문 분야의 필요성이 증대하였다. 이에 따라 환경대학원은 행정대학원 소속 이던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를 흡수하고 새로이 조경학과를 설치하여 개원하였다. 학생 정원은 120명으로 주간과 야간으로 나누어 수업하였다.

한편 1960~1970년대에는 전반적으로 학문이 성장하여 본 궤도에 오르고, 보다 전문화 다양화하는 추세에 힘입어 일반 대학원에도 여러 학과가 증설되었다. 먼저 박사학위는 1961년 정치학 박사학위가 신설되어 11개 분야로 늘어났다. 석사과정 설치학과도 1961년 이래 1975년까지 고고 인류학, 사회사업학, 무역학, 경영학, 응용 미술학, 국악, 해양학, 천문 기상학, 핵 공학, 산업 공학, 재료 공학, 가정학, 미생물학, 식물학, 동물학, 간호학 등 16개 학과가 설치되고 생물학과가 동물학과, 식물학과, 미생물학과로 세 분되어 총 67개 학과로 늘어났다.

1960년대 이래 박정희 정권의 근대화 정책과 함께 서울대학교의 교육 기구는 이공계를 중심으로 급속히 팽창하였다. 이와 더불어 개교 이래 계속된 ‘연립대학교’ 성격을 벗어나 질적 성장을 도모할 필요성도 더욱 증가하였다. 그리고 이는 결국 1970년대 서울대학교 종합화 계획으로 나타났다.

〈표 3-2-4〉 연도별 대학원 설치 학과 수(1961~1974년)

연도 구분	1961	1963	1966	1969	1971	1972	1973	1974
석사	56	58	62	64	64	64	66	67
박사	21	34	43	43	43	47	47	47

출전: 서울대학교 40년사편찬위원회, 1986 『서울대학교 40년사』, 211쪽.

### 제3절 종합화와 교육 단위 개편(1974~1994년)

#### 1) '교육연구 및 기구조직계획' 과 교육 기구 개편

##### (1) 교육연구 및 기구조직계획과 단과대학 재편

서울대학교는 개교 당시부터 종합대학교를 표방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각 단과대학들이 여러 곳에 흩어진 채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가진 연립체적인 성격이 강하였다. 그것은 '서울대생'이라는 공동체 의식 부재와 같은 문제만이 아니라, 시설의 지리적 분산으로 인한 불편함과 비효율, 비경제적인 재정 운용 등 학문의 교류와 발전에 여러모로 장애가 되었다. 그리하여 서울대학교는 1950년대 말부터 종합화를 지향하는 방안을 여러 차례 계획하였으나 예산 등의 문제로 번번이 구상 단계에서 그쳐야만 했다(각종 종합화 계획에 대해서는 제2부 운영의 제2장 1절 참조).

종합화 구상이 실현 단계에 접어든 것은 1968년 4월에 '서울대학교 종합10개년계획'(이하 종합10개년계획)이 최종 확정되면서부터였다. 종합10개년계획은 기본적으로 분산된 캠퍼스를 통합하는 것이 주요 목표였으나, 이를 계기로 교육의 질적 향상과 학술연구의 진흥도 함께 도모하여 서울대학교를 세계적인 대학으로 성장시키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종합10개년계획은 캠퍼스 이전과 건설을 다루는 캠퍼스종합건설계획(Campus Master Plan)과 교육기구 및 행정조직 개편을 모색하는 교육연구 및 기구조직계획(Academic Plan)으로 나뉘어 추진되었다.

종합화 계획의 실행을 위한 기구 개편은 1970년 4월 8일에 '서울대학교설치령' 제정과 함께 시작하였다. 종전 국립학교설치령이 다른 국립대학들과 서울대학교를 함께 다룬 데 비해 서울대학교설치령은 서울대학교만을 분리하여 그 특수성과 독자성을 강화한 것으로, 2006년 현재까지 서울대학교의 설치와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서울대학교설치령 제11조는 캠퍼스 건설과 이전을 추진할 기구로 총장 밑에 건설본부를 둔다고 규정하였고, 제12조는 총장 자문 기구로 기획위원회를 둘 것을 명기하였다. 기획위원회는 종합화 계획에 관한 총장 자문 기관으로, 한심석 부총장을 비롯하여 19명이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기획위원회 밑에 다시 교육연구 및 기구조직분과위원회와 시설분과위원회를 두었는데, 이 가운데 교육연구 및 기구조직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가 교육연구 및 기구조직계획을 담당하였다. 여기에는 나옹배 위원장을 포함하여 권



숙일, 박원희, 이광호, 이흥구, 정원식, 조석준 등 총 7명의 위원이 참여하였다.

분과위원회는 수차례의 회의와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여러 번에 걸쳐 교육연구 및 기구조직계획의 시안을 마련하였다. 1차 보고서는 1970년 7월에 작성하여 기획위원회에 보고하고, 동년 10월 12일, 『대학신문』에 공개하였다. 그리고 1971년 2월에 분과위원회는 1차 보고서를 보완한 2차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때 소위원회(위원: 김철수, 이해영, 조순)를 새로 조직하여 2차 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맡겼고, 소위원회는 그해 9월 2차 보고서에 대한 대안 보고서를 마련하였다. 1971년 10월 11일~15일에는 '서울대 10개년 종합화 계획을 위한 국제 학술 회의'를 개최하여, 해외에서 온 17명의 학자들에게 서울대학교 종합화 계획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1971년 12월, 마침내 기획위원회는 그때까지 논의된 내용을 종합 검토하여 최종 보고서를 확정하였다. 그러나 이 최종 보고서도 여러 문제점을 지적 받아 1973년 9월에 수정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다시 고친 것을 학교 당국이 1974년 12월 30일에 최종안으로 확정하였다. 1975년 2월 25일, 이 안은 국무회의 인준을 통과함으로써 정부의 공식 인가를 받았다. 동시에 서울대학교설치령을 개정하여 이를 반영하였다.

이상과 같은 과정을 거쳐 마련된 교육연구 및 기구조직계획은 다음과 같은 교육 기구 편성 원칙에 기반하여 교육 기구를 새로 개편하였다.

#### 교육 기구 편성 원칙

- 서울대학교의 교육 기구는 기본 과학과 전문 학문의 영역으로 크게 구분하여 편성한다.
  - 서울대학교에 부하된 사회적 국가적 사명과 기능은 우수한 학문적 교육과 연구 개발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직접적으로 필요로 하는 고등 인력을 양성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기본 과학 교육과 전문 학문 교육의 이중적 책임과 기능을 받아들여야 한다.
- 대학부 교육과 대학원 교육의 연계
  - 대학원은 교육 기구 조직상 대학부 교육에서 독립하지 않고 기본 과학 및 전문 학문 별로 대학부 교육을 연장한 형태가 된다. 이와 같은 구상은 현재와 같이 대학원이 독립된 교육 단위 기관으로 존재할 때 오는 전임 교수 부재의 현상을 시정하고, 앞으로 서울대가 지향해야 할 대학원 중심 교육의 기본 방침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 학과 조직의 세분화 지양 및 유사 학과의 통합
  - 학과 조직은 학문 간 교류를 촉진하고 단일 학문 내의 통합된 연구를 증진하기 위하여 학문적 세분화를 지양하고 비교적 광역의 분류에 의한 조직을 한다. 이와 같은 경향은 고등교육에서 세계적인 추세로, 서울대학교 내에 있는 유사 학과는 이를 통합하여 단일 학과로 한다.

· 기본 학문 분류 기준

- 독립된 학문 계열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통적으로 기초 학문 영역으로 인정된 것이라야 하며, 학문적으로 인정되는 수개 학과를 하위 구조에 포함해야 한다. 상호 독립성을 인정하고 최대한 중복성을 배제하도록 한다.

· 전문 학문 분류 기준

- 독립된 단과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학생과 교수의 규모가 대학 운영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기준에 도달해야 하고, 전문 학문으로서 독자적인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전문인 양성은 다른 대학과의 지나친 중복을 가급적 피하고 보완 관계를 고려한다.

교육 기구

위에서 서술한 편성 원칙에 입각, 서울대학교의 교육 이념과 교육적 기능을 최대한 달성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구를 편성한다.

· 기본 학문 대학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으로 구성하며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서울대학교 전체 학생에게 학사 교육으로서 필요한 기초 강좌를 제공한다.

나. 해당 학부 및 대학원생에 필요한 전공 강좌를 제공한다.

다. 전문 학문 대학 학생을 위해 선택 과정을 제공한다.

· 전문 학문 대학

경영대학, 공과대학, 사범대학, 농과대학, 법과대학, 수의과대학, 약학대학, 의과대학, 치과대학, 가정대학, 미술대학, 음악대학으로 구성한다. 그 기능은 전문인 양성을 위한 학사과정 교육과 전문 학문 분야의 연구 개발이다. 각 전문 학문 대학이 제공하는 강좌는 전문 학문에 한정된 강좌이며, 소속 학생에게 필요한 기초 과목은 기본 학문 대학에서 제공하는 강좌를 선택하도록 한다.

· 대학원

대학원은 대학부 학사과정의 연장으로 연구 활동의 중추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이며 동시에 연구 결과의 전수를 통하여 장차 연구와 교육에 종사할 대학교수를 양성하며 또한 이 나라와 사회에 봉사할 고등 인력을 배출함을 목표로 한다. 대학원의 학과 조직은 기본 학문 대학 및 전문 학문 대학 대학장이 신청한 학과를 범위로 하나, 대학원위원회에서 설정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 특수 대학원은 학부가 없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그런데 교육연구 및 기구조직계획은 여러 차례 시안이 개정되면서 시안에 따라 내용도 바뀌었다. 가령 법과대학을 5년제로 한다는 내용, 어느 계열에도 소속되기 어려운

체육과학과, 사회사업과는 서울대학교 직할학과로 둔다고 한 내용이 있었다. 그러나 이 안들은 최종안에서 모두 삭제되었다.

또, 교육연구 및 기구조직계획의 시안이 공개되면서 그에 대한 찬반 논란이 학내 뿐 아니라 학외에서도 분분하였다. 한쪽에서는 “현실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너무 이상적인 안이다”라고 실현 가능성을 의문시한 반면, 다른 쪽에서는 “획기적인 개혁의 기회를 놓친 현실 타협안이다”라고 비판하였다. 과 통폐합과 같은 교육 기구 개편은 부차적이고, 무엇보다 대학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도 많이 제시되었다.

시안에서 학과를 폐지하기로 결정된 단위에서 이에 격렬하게 반대하는 소동도 있었다. 종합화 계획으로 해체되는 상과대학의 반발이 특히 심했는데, 1975년 12월에 학생들이 총장실을 점거하고 항의 농성을 벌였고, 동창들과 교수들이 총장에게 항의문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상과대학은 또 경제학과를 계획안대로 사회과학대학에 소속시킬 것이 아니라 경영대학에 소속시킬 것을 주장하여 위원들과 갈등을 빚기도 하였다. 공과대학 재료공학과도 과 폐지에 반발한 학생들이 총장실로 몰려가 현관을 부수며 반발하였다. 그들의 불만은 재료공학과를 없애고 요업공학과가 생김으로써 학문 선택의 폭이 줄었다는 것과 폐지가 확정될 때까지 소속과 교수나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전혀 상의나 사전 통보가 없었다는 점이었다.

결국 교육연구 및 기구조직계획 시행 결과 13개 단과대학, 대학원, 6개 전문 대학원 체제였던 서울대학교 교육 기구 편제는 3개 기초 학문 대학, 12개 전문 학문 대학, 3개 전문 대학원으로 재편되었다. 무엇보다 개교 이래 ‘대학 중의 대학’을 자임하며 순수 기초 학문을 교육 연구하던 문리과대학을 해체하여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으로 분리한 것이 가장 큰 변화였다. 그리고 개교와 함께 설치된 상과대학을 해체하고, 상과대학에 속했던 경영학과를 경영대학으로 분리 독립시켰다.

그 외 구체적인 학과 조직 차원의 변동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문리과대학에서 단일 학과로 편성되었던 고고인류학과가 인문대학의 고고학과와 사회과학대학의 인류학과로 개편되었으며, 천문기상학과도 자연과학대학의 천문학과와 기상학과로 분리되었



그림 3-2-1 1975년에 열린 아카데미 플랜에 대한 회고와 반성 좌담회. 좌로부터 교육연구 및 기구 조직분과위원회의 이광호, 나용배, 권숙일, 정원식, 이흥구 교수.

〈표 3-2-5〉 1975년 종합화 이후 교육 기구 편성 상황

단과대학(학과 수)	학 과
인문대학(11)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중어중문학과, 불어불문학과, 독어독문학과, 언어학과, 국사학과, 동양사학과, 서양사학과, 철학과, 고고학과
사회과학대학(10)	정치학과, 외교학과, 경제학과, 무역학과, 사회학과, 인류학과, 심리학과, 지리학과, 사회사업학과, 신문학과
자연과학대학(14)	수학과, 계산통계학과, 물리학과, 천문학과, 화학과, 식물학과, 동물학과, 미생물학과, 기상학과, 지질학과, 해양학과, 의예과, 치의예과, 수의예과
경영대학(1)	경영학과
공과대학(17)	건축학과, 공업교육학과, 공업화학학과, 금속공학과, 기계공학과, 기계설계과, 산업공학과, 섬유공학과, 요업공학과, 원자핵공학과, 자원공학과,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토목공학과, 항공공학과, 화학공학과, 조선공학과
법과대학(1)	법학과
사범대학(7)	교육학과, 국어교육과, 외국어교육과, 사회교육과, 수학교육과, 과학교육과, 체육교육과
농과대학(14)	농학과, 원예학과, 임학과, 임산공학과, 농화학과, 식품공학과, 농경제학과, 축산학과, 잠사학과, 농업생물학과, 농공학과, 농가정학과, 농업교육과, 조경학과
약학대학(2)	약학과, 제약학과
의과대학(2)	의학과, 간호학과
수의과대학(1)	수의학과
치과대학(1)	치의학과
가정대학(3)	가정관리학과, 식품영양학과, 의류학과
미술대학(3)	회화과, 조소과, 응용미술학과
음악대학(4)	성악과, 작곡과, 기악과, 국악과
총 15개 대학, 88개 학과, 3개 예과	

다. 자연과학대학에는 계산통계학과를 신설하였다. 상과대학이 해체되면서 상과대학 소속이었던 경제학과, 무역학과는 사회과학대학으로 편입되었고, 신문대학원을 폐지하면서 사회과학대학에 신문학과를 새로 설치하였다. 법과대학은 행정학과를 법학과로 흡수 통합하였다. 사범대학은 체육과가 체육교육과로 개칭하였다. 또한 단과대학으로 경영대학이 경영학과 단일 학과 체제로 신설되었다.

공과대학의 경우 다른 단과대학보다 훨씬 많은 변화가 있었다. 먼저 건축공학과는 건

축학과로, 재료공학과는 요업공학과로, 원자력공학과는 원자핵공학과로 개칭하였다. 또 공업화학과를 신설하고, 응용수학과, 응용물리학과, 응용화학과는 폐지하여 자연과 대학의 각 학과로 흡수 편입하였다. 공업화학과 신설은 응용화학과의 화학공학과와 공업 화학 전공을 모체로 한 것이었으며, ‘응용 3과’ 폐지는 유사 학과의 통합 원칙에 따른 것이었다.

## (2) 대학원 기구 종합화

교육연구 및 기구조직계획은 단과대학 및 학과 조직 개편과 더불어 학부 교육과 대학원 교육의 연계를 주요 목표로 삼았다. 대학원과정 교육을 교육 기구 조직상 학부과정 교육에서 독립한 것이 아니라, 기본 학문 및 전문 학문별로 학부과정 교육의 연장 형태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대학원과정은 대학원장이 각 대학장에게 위탁하여 학사과정과 종적으로 연계 운영하였고 대학원생의 학사 관리도 학부의 학과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다만 전문 대학원은 해당 학부가 없는 관계로 연계 운영에서 제외하여, 학부과정이 없는 보건대학원, 환경대학원, 행정대학원만을 존속시키고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신문대학원은 폐지하였다. 그 결과 당시 이들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소속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영·신문·교육대학원 수업은 과거 형태로 지속하되 명칭만 대학원 경영학과, 신문학과, 교육학과로 개칭하였다. 따라서 경영학과의 경우 기존 경영대학원 수업(주간과 야간)과 개편된 일반대학원 경영학과 수업이 동시에 이루어져, 같은 학과 명칭 아래 세 가지 형태의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신문학과, 교육학과도 비슷한 양상이었다. 그러나 이는 제도 개혁에 따른 과도기적 현상으로 1977년을 기점으로 완전히 해소되었다.

특기할 점은 교육대학원을 없애는 대신 교육학과에 서울대학교 최초로 협동과정을 신설하여 교육대학원에 있던 가정 교육, 상업 교육, 미술 교육, 음악 교육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한 것이다. 협동 과정은 학문 간 상호 교류로 새로운 분야의 학위 과정 개설이 필요할 때, 새로운 학과·대학을 신설하지 않고 문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총장이 2개 이상의 기존 학과 대학(원) 간의 과정으로 설치하였다.

그 외 일반 대학원의 석·박사과정도 대학 기구 개편과 연동하여 신설 또는 개명되었다. 1976년 5월 현재 대학원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개설 현황은 다음과 같다.

## · 석사 및 박사과정 모두 개설

국어국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불어불문학과, 독어독문학과, 언어학과, 국사학과, 동양사학과, 서양사학과, 철학과(철학 전공, 종교학 전공), 정치학과, 외교학과, 경제학과, 사회학과, 무역학과, 심리학과, 지리학과, 사회사업과, 신문학과, 경영학과, 법학과, 농경제학과, 공업화학과, 금속공학과, 기계공학과, 섬유공학과, 원자핵공학과, 자원공학과,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조선공학과, 토목공학과, 항공공학과, 화학공학과,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식물학과, 동물학과, 기상학과, 지질학과, 미생물학과, 해양학과, 약학과, 건축학과, 식품영양학과, 농학과, 임학과, 농화학과, 축산학과, 잠사학과, 농생물학과, 농공학과, 의학과, 치의학과, 수의학과.

## · 석사과정만 개설

철학과(미학 전공), 고고학과, 인류학과, 교육학과(교육 행정 전공, 교육 심리 전공, 교육 과정 전공), 협동과정(음악 교육 전공, 미술 교육 전공, 가정 교육 전공, 상업 교육 전공), 국어교육과, 외국어교육과(영어 전공, 불어 전공, 독어 전공), 사회교육과(일반 사회 전공, 역사 전공, 지리 전공), 산업공학과, 요업공학과, 농가정학과, 체육교육과, 회화과, 조소과, 응용미술과, 성악과, 작곡과, 기악과, 국악과, 계산통계학과(계산학 전공, 통계학 전공), 천문학과, 공업교육과, 수학교육과, 과학교육과(물리 전공, 화학 전공, 생물 전공, 지학 전공), 가정관리학과, 의류학과, 원예학과, 농업교육과, 간호학과.

## 2) 실험 대학 참여와 계열별 모집

1960년대 박정희 정권은 대학 정비책, 학사 자격 고시제, 대학 정원 통제, 대학 예비고사 실시 등 주로 통제 위주의 대학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외적으로는 어느 정도 대학 문제를 수습하는 듯하였다. 그러나 이는 지나치게 급격한 변화를 야기한데다, 정부의 강력한 주도로 추진되어서 사회 여론도 좋지 않았다.

정부는 1970년대부터 이에 대한 반성으로 육성과 통제를 병행하는 가운데 대학이 참여하는 점진적인 개혁으로 정책 방향을 수정하였다. 이러한 정책 전환에는 1960년대 말 각 대학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발전 계획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

문교부는 1971년 7월에 고등교육정책심의회를 발족하고 9월에 그 산하 기구로 고등

교육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본격적인 ‘대학 교육 개혁’ 사업을 추진하였다. 대학 교육 개혁 사업은 실험 대학의 운영을 통한 개혁, 대학의 특성화를 통한 개혁, 장기적인 정책 연구를 통한 개혁 등 크게 이 세 가지 방향에서 시행되었다. 그중 실험 대학은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고 교육 운영의 신축성을 가지며 점진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대학”을 선정하여, 대학 교육 개혁 사업에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는 계획이었다. 첫해인 1973년에는 14개 신청 대학 가운데 10개 대학을 선정하여 ① 졸업 학점 감축, ② 계열별 모집, ③ 부전공제를 실시하였고, 1974년에는 2차로 10개 신청 대학 가운데 6개 대학을 선정하여 ① 계열별 학점 취득제, ② 복수 전공제, ③ 학기제의 개선, ④ 등록금 제도의 개선, ⑤ 학점 계산 방법의 변경, ⑥ 법정 교양 과목의 자율화 조치를 시행하였다.

일찍이 교육연구 및 기구조직계획에서 실험 대학의 취지와 부합하는 내용의 개혁 방향을 제시하였던 서울대학교도 1973년 9월에 ‘대학 교육 개선을 위한 실험 대학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때 제시된 실험 대학의 주요 내용은 ① 계열별 신입생 모집, ② 140학점으로 졸업 학점 감축, ③ 부전공제 실시 등 3개 항목이었다. 그리고 문교부의 실험 대학 지정을 받아 1974년부터 실험 대학을 운영하고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였다.

〈표 3-2-6〉 1974학년도 계열별 모집 내역

계열별	모집학과	모집 정원
인문계	국어국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독어독문학과, 불어불문학과, 언어학과, 국사학과, 동양사학과, 서양사학과, 철학과, 고고인류학과	185명 이내
사회계	사회학과, 사회사업학과, 정치학과, 외교학과, 심리학과, 지리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무역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농경제학과	485명 이내
자연계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식물학과, 동물학과, 지질학과, 천문기상학과, 해양학과, 미생물학과, 건축공학과, 자원공학과, 금속공학과, 기계공학과, 섬유공학과, 원자력공학과,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조선공학과, 항공공학과, 토목공학과, 화학공학과, 농업공학과, 재료공학과, 기계설계학과, 공업교육학과, 약학과, 제약학과, 응용수학과, 응용물리학과, 응용화학	1,120명 이내
가정계	가정관리학과, 식품영양학과, 의류학과	90명 이내
교육계	인문사회계: 교육과, 국어교육과, 외국어교육과, 사회교육과 자연계: 과학교육과, 수학교육과	210명 이내 160명 이내
농학계	농학과, 임학과, 축산학과, 농공학과, 농화학과, 농경제학과, 농생물학과, 잠사학과, 원예학과, 식품공학과, 임산가공학과, 조경학과, 농업교육학과, 농가정학과	310명 이내

〈표 3-2-7〉 1974학년도 과별 모집 내역

대학	학과	모집 정원
의과대학	의예과	160명
	간호학과	80명
치과대학	치의예과	100명
수의과대학	수의예과	80명
음악대학	성악과	30명
	작곡과	15명
	기악과	60명
	국악과	25명
미술대학	회화과	25명
	조소과	15명
	응용미술과	30명
농과대학	농가정학과(여자에 한함)	20명
사범대학	체육학과	40명

계열별 모집은 우선 교육연구 및 기구조직계획에서 제시한 “기본·전문 학문 영역으로 대별한다”는 원칙을 반영하여 인문·사회·자연의 세 개 계열로 나누어 시행하였고, 종합화의 진전 정도에 따라 단과대학별 모집과 비계열 모집도 잠정적으로 병행하였다. 이 해 전체 모집 인원 3,240명 가운데 2,560명을 계열별로 모집하였다. 단, 〈표 3-2-7〉의 단과대학과 학과의 680명은 전공 특성상 계열별 모집을 하지 않았다.

계열별 모집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각각 교양과정부(인문·사회·자연·교육계)와 문리과대학(의예과·치의예과·수의예과), 농과대학 가정대학(농학·가정계)에서 기초 과정 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1975년부터는 아래와 같이 종합화로 개편된 교육 기구에 속해 1~2년의 기초 과정 교육을 받았으며, 1976년부터는 기초 과정 교육 기간이 문과 계열과 이과 계열 공히 1년으로 조정되었다.

그런데 애초 신입생 선발을 학과별에서 계열별 모집으로 전환한 취지는 “학생 각자의 적성과 소질 또는 희망보다 성적에 따라 근시안적으로 학과를 선택하는 폐단을 없애고, 직업 선택에 영향을 미칠 전공 선택에 신중을 기하게 하며, 인간성 회복을 위한 기초 교양 교육을 충분히 받을 기회를 준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학과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성숙된 판단력을 기반으로 한 자율적인 학과 선택을 보장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



〈표 3-2-8〉 기초 과정 학생의 대학별 소속(1975학년도)

소속 대학	입학 시 계열별 분류	기초 과정 기간
인문대학	인문 계열, 교육 계열의 인문·사회계,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1년 반
사회과학대학	사회 과학 계열	1년 반
자연과학대학	자연 과학 계열, 교육 계열 자연계, 가정 계열, 농학 계열	1년
	의예과, 치의예과, 수의예과	2년(예과 과정)
	농가정학과, 의과대학 간호학과	1년

한 이상(理想)과 달리 실제 학생들이 기초 과정 교육을 마치고 전공을 선택할 때는 일부 인기 학과에 몰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었다. 대학 당국은 이에 대비하여 시행 첫해부터 다음과 같이 학과 배정 원칙을 정해 두었다.

1. 학과 배정은 학생의 지망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도나 권유는 있어도 강제는 없다.
2. 지망자 수가 배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엔 학업 성적 순으로 배정한다.
3. 학업 성적이 일정 수준에 미달한 자는 학과 배정을 받지 못하나, 이 기준을 넘은 자로서 학과배정을 지망하는 자에게는 어느 학과인가 배정을 보장한다.
4. 학생에게 지망 변경의 기회를 최대한 부여하되, 일단 학과 배정이 결정된 후에는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
5. 자진 유급하는 길을 최대한 막는다.
6. 인문·사회 양계열을 제외하고 계열 간의 교류는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최초의 계열별 입학생에 대해 1975년에 처음으로 두 차례에 걸쳐 과 배정을 실시한 결과, 일부 학과에 대한 지원 집중과 비인기학과 미달, 과 배정 포기자 발생 등 계획 단계에서 이미 예상하였던 문제점이 그대로 나타났다. 희망 학과에 배정받지 못한 일부 학생들이 전공 학과에 적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학과에 대한 불만 때문에 정상적인 학교 생활에서 이탈하는 폐단도 있었다. 당시 교무처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1975년의 학과 배정 결과 25%, 1976년에는 8%의 학생이 제1지망 학과에 배정받지 못했다. 제1지망 학과에 배정받은 학생들도 상당수는 자신의 위치가 밝혀진 성적을 기준으로 지망 학과를 결정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지망 학과에 들어가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런 현상에 대해 “학생들이 과 선택을 자기 적성에 따라 하지 않고, 너무 유행에 따

른다”라고 하여 학생들의 태도를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희망이나 적성이 아닌 오로지 성적에 의한 배정이 문제”라는 의견, “문교부가 과 정원을 정해 놓은 것이 문제 발생의 원인”이라는 의견도 많았다.

이미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학교 당국은 최초 지망 학과에 배정된 학생 비율이 자연 과학 계열의 경우 60~95%에 이르고(1975년), 학과별 모집을 하면 탈락하였을 우수한 학생들이 계열별 모집 덕분에 입학할 수 있었다는 이유를 들어 계열별 모집을 계속 시행하고자 하였다. 문제점들은 배정 인원에 융통성을 부여하고, 학과 진학 지도를 좀더 철저하게 체계적으로 실시하면서 부전공제를 강화하면,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하지만 학과 안내서 배부, 지도 교수의 개별 상담을 통한 학과 지망 지도, 각 대학에 학과 지망 지도를 전담하는 기구 설치 등 대학 당국이 취한 일련의 학과 지망 지도는 학생들에게 별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다. 학과 배정에서 나타난 모순과 학생들의 불만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됐던 부전공 제도도 학생들의 외면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부전공 제도가 처음 실시된 1976년 1학기에 부전공을 지원한 학생은 160명, 2학기에 119명, 1977년 1학기에 113명, 2학기에 78명, 1978년에 1학기 115명, 2학기에 70명 등으로 오히려 감소 추세를 보였다. 대상 학생 중 많아야 5%, 적을 경우 1% 비율의 학생만이 신청하는 것에 그친 것이다. 그나마 신청 학생들도 경제학이나 경영학과 등 인기 학과에 몰려 부전공제 시행 의도를 무색케 하였다. 부전공 제도의 부진은 학생들의 인식 부족도 큰 이유였으나, 주전공과 부전공 수업 시간이 겹치는 경우가 많고, 부전공 취득 학점이 24학점밖에 안 되어 학생 스스로가 실질적인 전공 실력을 의심하는 등 제도적 미비 때문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대학 당국은 학과 배정 규정을 아래와 같이 해마다 수정하였다.

- 1976학년도: 학과 정원의 50%를 1지망자 중에서 배정하고 나머지 50%를 1·2·3지망자 전체에서 배정하던 종전의 방식을 바꾸어, 1지망자 중에서 100%를 배정하고 탈락자는 정원 미달학과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변화.
- 1977학년도: 인문·사회·교육 계열 학생의 과 배정을 3학기를 마친 후에 하던 것을 다른 계열과 마찬가지로 2학기를 마친 후 하는 것으로 바꿈. 인문·사회 계열의 상호 교류 원칙 폐기.
- 1980학년도: 1979년 모집 단위가 계열별에서 단과 대학으로 바뀜. 과 배정도 학적과에서 일률적으로 관리하던 것을 각 대학에 위임하고, 학과 배정 인원도 융통성이 증가되

어 학과 정원의 50~130%까지 배정이 가능하게 됨.

- 1982학년도: 1981년부터 본고사가 폐지됨에 따라 배정 기준을 1학년 학업 성적만으로 산출. 그리고 1981년 졸업 정원제 실시에 따라 학과 정원 조정의 신축성이 위축됨.



그림 3-2-2 계열별 모집을 실시하던 1979학년도의 과배정 발표 광경

그러나 계열별 모집에 따른 문제점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하였고, 해를 거듭할수록 같은 문제점들이 반복하여 발생하였다. 1979년 배정의 1차 학과 배정에서는 사회 과학 계열의 인류학과, 심리학과, 사회복지학과, 지리학과, 농경제학과, 신문학과, 자연 과학 계열의 기상학과, 지질학과에 지원자가 1명도 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또 이해 학과 배정 결과 30개 학과가 정원을 초과한 반면 27개 학과는 정원을 채우지 못하였다.

일부 학과에 대한 지원자 편중 혹은 기피 경향으로 학문 발달이 기형적으로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계열별 모집에 대한 비판 여론은 높아져만 갔다. 1970년대 후반부터는 계열별 모집은 시기상조이므로 다시 과별 모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보다는 현 제도를 수정하여 잘 운영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우세하다가, 1980년대 들어 과별 모집 주장은 더욱 힘을 얻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결국 1984학년도 모집부터 10년 만에 다시 과별 모집으로 환원되었다.

계열별 모집은 학생들의 전공 선택의 기회 확대 등 그 이상(理想)에도 불구하고 결국 현실에 제대로 뿌리 내리지 못하였다. 이때 드러난 이상과 현실의 충돌, 그리고 많은 문제점들은 제대로 된 논의나 해결 방안의 모색을 보지 못한 채 계열별 모집의 폐지와 함께 사라졌다. 그 결과 10년 뒤 모집 단위 광역화라는 계열별 모집의 변종이 등장하였을 때 그 문제점들은 거의 그대로 반복되었다.

### 3) 종합화 이후 학과 증설과 명칭 변경

1975년 종합화와 함께 교육 기구가 대대적으로 개편된 후, 1970년대 후반 서울대학교 교육 기구는 약간만 변화하였다. 1978년 12월 공과대학의 공업교육과를 폐지하고,

자동 제어, 계측 제어에 관한 분야와 컴퓨터 분야를 교육·연구하기 위해 각각 계측제어공학과와 전자계산학과를 신설하였다. 공업교육과의 폐지는 1977년에 문교부가 충남대학교 공과대학을 공업교육대학으로 개편하여 전국 각 대학에 설치된 공업교육학과를 이곳에 통합한 조처에 따른 것이었다. 전자계산학과는 1979년 12월에 전자계산기공학과로 이름을 바꾸었으며, 이때 사회과학대학의 사회사업학과도 사회복지학과로 개명하였다.

1980년대 초 졸업 정원제 시행으로 학생 수가 대폭 증가하면서 학과도 계속 증설·개편되었다. 또한 1980년대에는 많은 과들이 시대 변화에 발맞추어 과 이름을 바꾸었다. 이러한 개명은 단순히 외적으로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각 교육 기구가 지향하는 교육 목표와 내용을 새롭게 규정한다는 의미도 있었다.

먼저 1981년 2월, 사범대학에 국민윤리교육과를 신설하였는데, 대학원과정은 이미 1976년 12월에 신설된 상태였다. 국민윤리교육과는 중·고등학교의 도덕과·윤리과를 담당할 교사 양성과 우리 사회의 도덕적·윤리적 문제들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탐구하는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였다. 같은 해 3월 법학과 단일 체제였던 법과대학은 공법학과와 사법학과로 분리되었다. 이는 1975년 종합화 이전의 법학과·행정학과 체제 부활과 함께 사법 시험 일변도의 분위기에서 벗어나 법률 소양을 갖춘 행정 관료를 양성하고 법학의 균형 있는 발전을 추구한다는 의미가 있었다.

1982년 5월에는 사범대학의 각 전공을 학과로 독립시켰다. 그리하여 외국어교육과의 영어·독어·불어 전공이 영어교육과, 불어교육과, 독어교육과로, 사회교육과의 일반사회·역사·지리 전공이 사회교육과, 역사교육과, 지리교육과로, 과학교육과의 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 전공이 물리교육과, 화학교육과, 생물교육과, 지구과학교육과로 승격되었다. 이로써 사범대학은 창립 이래 가장 많은 과를 개설하게 되었다. 이때 자연과학대학의 지질학과는 지질과학과로 이름을 바꾸었다.

1983년 3월 공과대학 요업공학과가 무기재료공학과로, 계측제어공학과가 제어계측공학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1975년 종합화 때 재료공학과를 요업공학과로 개칭하였는데, 당시 계열별 모집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전공을 선택할 때 선호도가 매우 낮았다. 그 원인 가운데 하나가 학과 명칭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었고, 이에 무기재료학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교수들의 연구 활동도 더욱 활발해졌다. 같은 해 11월, 미술대학의 회화과를 동양화과와 서양화과로, 응용미술학과를 공예과와 산업미술과로 분리하였다. 이로써 미술대학은 3과 체제에서 5과

체제로 확대되었다. 한편, 인문대학 고고학과는 고고미술사학과로 이름을 바꾸었다. 이는 체계적인 미술사 교육과 인재 양성을 통해 당시 전문 인력 부족에 허덕이던 미술사 학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였다.

1984년 2월 인문대학에 노어노문학과와 서어서문학과를 신설하여 그 동안 부진했던 러시아어 문학과 스페인어 문학의 교육·연구에 일대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이들 학과는 개설 초 교수진과 교재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으나, 이를 극복하고 곧 안정적인 교육·연구 기반을 마련하였다.

1984년 12월 인문대학 철학과 내의 철학·종교학·미학 전공이 각각 철학과, 종교학과, 미학과로 승격하였다. 이는 문리과대학 시절인 1969년 12월에 철학과에 통합되었던 미학과·종교학과가 그 이전의 체제를 회복한 것이었다. 또 이때 사회과학대학 무역학과를 국제경제학과로 개칭하였다. 이후 1986년 4월 자연과학대학의 기상학과를 대기과학과로 개명하였고, 1988년 2월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를 소비자아동학과로, 공과대학의 전자계산기공학과를 컴퓨터공학과로 개명하였다. 또 1989년 미술대학의 산업미술과를 산업디자인과로 개칭하였다.

교육 기구의 개명은 1990년대도 계속되었다. 1991년 3월에 자연과학대학의 식물학과를 생물학과로, 동물학과를 분자생물학과로, 공과대학의 항공공학과를 항공우주공학과로 개칭하였으며, 1993년 4월에도 공과대학의 섬유공학과를 섬유고분자공학과로 바꾸었다.

한편 1992년 3월에는 의과대학에 속해 있던 간호학과가 간호대학으로 분리·독립하였다. 간호학과는 단과대학 독립 논의는 일찍이 1960년대 말부터 제기되었으나 교수진 부족 등의 이유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그러다 1980년대 초부터 다시 교수와 학생 모두가 본격적인 운동을 전개한 끝에 이때 결실을 보았다.

1992년 3월에는 또 농업과학대학이 “21세기는 생명과 환경의 시대”라는 모토를 내걸고 농업생명과학대학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동시에 임학과를 산림자원학과로, 축산학과를 동물자원과학과로, 임산기공학과를 임산공학과로 개칭하였다. 그리고 1993년 4월에는 공과대학의 섬유공학과가 섬유고분자공학과로 이름을 바꾸었다.

한편 1980~1990년대 초반의 대학원은 다원적이고 복잡한 현대 사회에 맞게 학문 간 협동과정이 본격적으로 설치되기 시작한 것이 특징이다. 협동과정은 일찍이 1970년대 중반 가정 상업 음악 미술 교육 협동과정을 설치한 후 한동안 추가로 개설되는 과가 없었다. 그러다 1983년 11월에 과학사 및 과학 철학 협동과정과 분자 생물학 전공 협동과

〈표 3-2-9〉 1994년 현재 교육 기구 상황

단과대학(학과 수)	학 과
인문대학(15)	국어국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불어불문학과, 독어독문학과, 노어노문학과, 서어서문학과, 언어학과, 국사학과, 동양사학과, 서양사학과, 고고미술사학과, 철학과, 종교학과, 미학과
사회과학대학(10)	정치학과, 외교학과, 경제학과, 국제경제학과, 사회학과, 인류학과, 심리학과, 지리학과, 사회복지학과, 신문학과
자연과학대학(13)	수학과, 계산통계학과, 물리학과, 천문학과, 화학과, 생물학과, 분자생물학과, 미생물학과, 대기과학과, 지질과학과, 해양학과, 의예과, 치의예과
경영대학(1)	경영학과
공과대학(19)	건축학과, 공업화학과, 금속공학과, 기계공학과, 기계설계학과, 무기재료공학과, 산업공학과, 섬유고분자공학과, 원자핵공학과, 자원공학과,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제어계측공학과, 조선해양공학과, 토목공학과, 항공우주공학과, 화학공학과, 전기·전자·제어공학군
법과대학(2)	공법학과, 사법학과
사범대학(15)	교육학과,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불어교육과, 독어교육과, 사회교육과, 역사교육과, 지리교육과, 국민윤리교육과, 수학교육과, 물리교육과, 화학교육과, 생물교육과, 지구과학교육과, 체육교육과
농과대학(14)	농학과, 산림자원학과, 동물자원과학과, 농공학과, 농화학과, 농경제학과, 농생물학과, 천연섬유학과, 농가정학과, 농업교육과, 원예학과, 식품공학과, 임산공학과, 조경학과
약학대학(2)	약학과, 제약학과
의과대학(2)	의학과
수의과대학(1)	수의학과
치과대학(1)	치의학과
가정대학(3)	소비자이동학과, 식품영양학과, 의류학과
미술대학(5)	동양화과, 서양화과, 조소과, 공예과, 산업디자인학과
음악대학(4)	성악과, 작곡과, 기악과, 국악과
간호대학(1)	간호학과
총 16개 대학, 103개 학과, 3개 예과	

비고: 전기·전자·제어공학군은 새로 설치한 모집 단위.

정의 석사과정을 신설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계속적으로 새로운 과가 설치되었다. 1987년 11월 과학사 및 과학 철학 협동과정 박사과정이 신설되었고, 1988년 10월에는 응용생체 공학 전공 협동과정, 생물 화학 공학 전공 협동과정의 석·박사과정이 신설되었다. 1989년 농업 생물 공학 협동과정 석·박사 과정이, 1991년에는 조경학 협동과정, 서양 고전학 협동과정이 새로 만들어졌다. 이때 분자생물학 협동과정은 유전 공학 협동과정으로 개명되었다. 협동 과정 외 학부 단위의 교육 기구 개편에 연동하여 대학원에도 신설 분리되거나 개명하는 과들이 많았다. 1994년 현재 서울대학교에 개설된 일반 대학원 과정은 석사과정이 92개 학과, 박사과정이 88개 학과였다. 전문 대학원의 경우 보건대학원의 보건학과와 환경보건학과, 행정대학원의 행정학과, 환경대학원의 환경계획학과, 환경조경학과 등 총 5개 과가 있었다.

종합화를 통해 대대적인 교육 기구 개편을 단행한 이후에도 서울대학교의 교육 기구는 더욱 세분화되고 증가하였다. 그리고 결국 1990년대, 세분화된 교육·연구 단위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학부제가 본격적으로 구상되기에 이르렀다.

## 제 4 절 학부제와 모집 단위 광역화(1994~2006년)

### 1) 대학원 중심 대학을 위한 학부제 구상

서울대학교는 1986년에 발표한 「서울대학교 발전장기계획」(1987~2001년)(이하 「장기계획」)에서 학부제 구상을 처음 공식적으로 드러냈다. 「장기계획」은 국제 수준의 대학원 중심 대학을 목표로, 학사과정 정원 축소와 대학원과정 정원 확대, 그리고 학부제 실시를 그 실현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장기계획」은 “학사과정 학생 규모가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어려울 만큼 과대하여 학사과정의 교육 여건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학사과정 교육에 과중한 부담을 안고 있는 교수로 하여금 대학원과정 교육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수 없게 한다”는 문제의식 하에 학사과정 정원 축소를 계획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학사과정 학생 규모를 대학원과정 학생의 2배 이내로 감축하여, 최종적으로 2001년까지 대학원과정 대 학사과정의 학생 비율을 1 : 1.8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또 이를 위

해 1987~1991학년도 학사과정 입학 정원을 매년 200명씩 감축하고 그 후 정원을 동결코자 하였다. 대학원과정 정원 증원을 위해 의과대학과 치의과대학은 점차 학사과정을 폐지하여 대학원과정으로 전환하고, 수의과대학과 법과대학 학제를 각각 예과 2년과 본과 4년, 예과 2년과 본과 3년으로 개편하려 하였다(예과 과정을 설치한 대학의 본과 3,4학년은 대학원과정으로 간주함). 또 국제 사회에서 전문가로 활약할 국내 인력을 양성하고, 후발 개발도상국 인력을 유치하여 한국의 개발 경험을 교육함으로써 해외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국제대학원을 전문 대학원으로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상과 같은 정원 조정안은 대학원과정 정원 확대보다는 주로 학사과정 정원 축소에 집중한 것으로, 대학원 정원 확대는 국가 사회의 발전에 따라 고급 두뇌와 전문 인력의 수요가 증증할 것을 예상하여 사실상 의학·치의학·법학 등 전문 분야 대학원의 정원 확대에 치중한 것이었다.

한편 대학원 중심 대학을 추구함에 따라 학사과정의 교육 목표는 기초 교양 과목 교육으로 전환하였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교육 기구 개편 작업으로 학부제를 구상하였다. 「장기계획」은 학부제 시행을 위해 1987년부터 1991년까지 아래와 같은 계획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 동일한 학문 분야 내 학과의 지나친 세분화로 학사과정의 전공 교육이 파행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경우를 시정하고, 대학본부에 집중되어 있는 대학 행정권을 대폭 분권화하여 연구 및 교육에 대한 행정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학부(division)를 설치함.
- 현행의 학과(department)들은 그대로 존치하되 학문적 연관성이 높은 학과들을 2~4개씩 묶어서 학부를 설치함.
- 교수와 학생은 모두 학과에 소속되며, 각 학과에는 현행대로 학과장을 두고, 동일 학부 내의 학과들은 상호 협의하여 교과 과정(curriculum)을 작성하되 각 학과는 독자적인 교과 과정을 가지면서 동일한 교과목을 각각 동시에 나열, 개설할 수 있게 함.
- 학과 행정실은 학부 행정실로 통합하되, 학부 행정실은 통합되는 각 학과 행정실의 인원 및 예산을 현행 수준으로부터 감축됨이 없이 흡수하며, 학부에는 학부장을 두고, 상위 행정직의 보강에 의해 현행 대학본부 및 대학 행정실의 행정권 중 많은 부분을 위임 받게 함.
-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농과대학 및 사범대학에 각각 4~6개 학부를 두며, 각 학부별 포용 학과는 시행 단계에서 검토하여 결정함.
- 불합리하게 세분되어 있는 학과들의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학사과정의 운영에 있어서 학부 내의 학과 구분이 무의미하게 되고 따라서 학사과정의 학과 구분이 스스로 소멸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와 같이 학과 구분이 소멸되는 학부의 경우에는 대학원과정에서의 전공 분리를 자유화함.

- 학부 내의 학과 구분이 스스로 소멸되지 않는 학부의 경우에는 학과의 폐합을 강제하지 않고 학과 구분이 그대로 유지되게 함.

이 안은 학부제를 지향하되 상당히 조심스럽고 온건한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하였다. 학과들의 상위 단위 기구로 학부를 두되 기존의 학과들은 그대로 존치한다고 하였으며, 학과 구분이 스스로 소멸할 것을 기대하고 강제로 학과를 통폐합하지 않는다고 명기하였다. 그럼에도 「장기계획」 구상의 실현은 1990년까지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각 단과대학과 학과에서 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다.

「장기계획」의 기반 조성을 위한 1단계 기간(1987~1991년)이 막바지에 접어들던 1990년 3월, 그간의 시행 사항을 평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발전장기계획에 대한 평가와 제언」(이하 「평가와 제언」)이 제출되었다. 이 보고서는 각 항목에 대한 추진 상황을 검토하고 부진 원인을 분석하였으며 향후 대책까지 마련하였다.

이에 따르면 대학원과정 정원 확대는 당초 계획보다 빨리 목표를 달성했으나 학사과정 정원 축소는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정하였다.

학사과정 정원의 축소 실패는 시행 첫해부터 학사과정 모집 정원이 계획보다 329명이나 많아 이후 연쇄적으로 계획 정원을 초과한 것, 1단계에서 시행하려던 의과대학의 학사과정 폐지와 대학원과정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등이 원인이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모집 정원 감축에 대한 단과대학과 학과의 반대가 문제였다. 결

〈표 3-2-10〉 대학원과정 학생 정원의 확대 계획과 실제 입학 정원 (단위: 명)

구분	1986년	1987년	1988년	1989년	1990년	1991년	1996년
입학 정원 계획	2,250	2,280	2,310	2,340	2,370	2,400	2,550
실제 입학 정원	2,250	2,250	2,295	2,395	-	-	-

〈표 3-2-11〉 학사과정 학생 정원의 감축 계획과 실제 입학 정원 (단위: 명)

구분	1986년	1987년	1988년	1989년	1990년	1991년	1996년
입학 정원 계획	4,645	4,445	4,245	4,045	3,845	3,645	3,645
실제 입학 정원	4,974	4,669	4,395	4,385	-	-	-

출전: 『서울대학교 발전장기계획에 대한 평가와 제언』, 73쪽.

국 「평가와 제언」은 학사과정 정원 감축을 포기하는 대신 대학원과정 정원을 더 늘려 당초의 목표 비율인 1 : 1.8을 달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학부제 계획은 정원 조정 계획보다 더욱 더 지지부진하였다. 각 단과대학과 학과들은 학부제의 기본 방향에는 찬성하는 듯했으나 막상 그것을 시행하려 하자 강하게 반대의 견을 표출하였다. 「평가와 제언」은 그 이유를 “자신의 소속 학과가 없어지거나 축소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학부 설치 시 유리한 점을 가시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았다. 그래서 “학과 구분이 스스로 소멸되는 것을 기대할 뿐 강제로 폐합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릴 것”, “연구비 우선 지원, 정원 우선 배정, 학부장에게 학장에 상응하는 예산권 및 인사권 부여” 등의 혜택을 줄 것을 대책으로 제시하였다.

1991년 11월, 대학 본부는 학부제 시행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위기의식 하에 「학부제도 실시에 관한 연구」란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장기계획」의 학부제 안이 학부제에 대한 대략적인 큰 틀의 구상만을 제시하였다면, 이 안은 학부제 시행을 위한 구체적이고도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이는 앞으로 본부가 학부제를 보다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했다.

먼저 「학부제도 실시에 관한 연구」는 학부제 실시에 따른 기대 효과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 관련 학문의 통합 운영으로 학제 간 연구(interdisciplinary study)가 확대될 것이며, 학제 간 공동 연구가 활성화될 것이다.
- 군소 학과의 경우 대부분의 전임 교수들이 교양 과정 및 전공 기초 과정 강의를 담당하고 있어, 막상 전공 강의는 다양하게 개설되지 못하였다. 학부제를 통해 학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전공 과정의 파행성을 극복할 수 있다.
- 학부제의 실시로 전임 교수들의 교양 과정과 기초 공통 과목의 강의 부담을 최소화함으로써 교수들의 전공 강의를 강화할 수 있으며 연구 활동을 강화할 수 있다.
- 교수들의 활동이 강의보다 연구 중심으로 전환되어 대학원 교육이 연구 중심의 세미나 수업이 될 수 있으며, 학사과정에서는 전공 기초 과목에 대한 폭넓은 교육이 가능하게 된다. 그 결과 대학원에서 전공 연구가 심화되어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다.
- 학과 세분화로 대학 입학생들에게 학과에 대한 지나친 전문 지식을 요구하고 있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 각 학과의 교수 및 학생들이 대학을 거쳐 대학본부와 간접적으로 연결되던 것이, 각 학부의 교수 및 학생 → 대학본부라는 직접적인 연결 구조를 갖게 됨으로써 대학 행정의 효율성이 제고된다.

- 학과의 세분화로 인해 학과 사무실 운영과 관련한 인력 및 예산의 낭비가 많았으며, 중복된 강좌 개설로 불필요한 강사로 지출이 많았다. 학부제로 이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그런 다음 학부제 실시를 위해서는 학부장의 지위 문제, 학과 존속 여부, 즉 학부 산하에 학과를 둘 것인가 아니면 전공 분리 수준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 소요 예산 확보 문제, 비인기 학문 분야의 폐지 문제 등을 선결해야 한다는 것도 분명히 밝혀 두었다.

학부제의 이상과 현실적인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학부제도 실시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이 학부제 추진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순차적으로 전 학과를 학부로 통합한다. 둘째, 학부의 수는 대략 40개 내지 50개를 넘지 않도록 한다. 셋째, 모든 학부를 동일하게 취급할 것이 아니라 학부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 적절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 넷째, 학부로 전환되는 학과들은 학과보다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하여 학부로 전환을 유도한다.

그리고 급격한 조직 개편에 따르는 부작용을 방지하고 학부제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다 효과적인 추진 전략을 세우기 위해, 아래와 같은 단계적인 실시 방안을 제시하였다.

- 1단계: 학부 설치가 가능한 몇 개의 경우를 시범적으로 추진하되, 우선 학부를 서울대 학교 내부 기관으로 설치하고, 편이상 동일 대학 내의 학과를 통합하여 학부로 만든다. 학부제 설치에 필요한 관련 법규의 정비 및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 2단계: 학부 운영의 개선을 통하여 학부 설치를 유도하고 학부제 운영에 필요한 각종 법규 및 제도를 완비해 나간다. 학부를 법정 기관화한다.
- 3단계: 학부제를 전면 실시하는 것을 결정한다. 서울대학교설치령, 학칙, 각종 규정 및 내규 등을 정비한다.

즉, 서울대학교의 내부 기관으로 학부를 먼저 설치한 다음, 그 후에 관련 법규 및 제도의 정비를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 것이다.

이처럼 본부 측에서 학부제 구상을 다듬어 가던 1991년, 공과대학의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제어계측공학과는 세 학과를 통합하여 1992학년도 신입생부터 전기전자제어공학군이라는 이름으로 모집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 학과군은 기존 3개 학과의 머리글자를 조합하여 ‘전·전·제’라고도 많이 불렀는데, 유사 학과를 통합한 학부제 형태로 이후 학내외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물론 법적인 인정은 아직 받지 못한 상

태였다.

그런데 본부가 학부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이전까지 미미했던 학부제 논의가 학내에서 활발해지기 시작한 해는 1994년이였다. 그 계기는 그해 9월 1일, 학장회가 발표한 ‘학부제 시행안’ 이었다. ‘학부제 시행안’ 은 1994년 5월 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구성된 교육·연구조직실행위원회가 작성하였다. 학부제 시행안은 학부제 시행 요건으로 ‘교육법시행령’ 개정 등 제도적인 장치 마련과 자율적 운용 보장 등을 제기하였는데, 학장회는 교육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각 단과대학의 자율적 실시를 유도하기로 결정하였다. 본부가 이러한 행동을 취한 배경에는 그동안 학부제 추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애로가 있었다는 점, 교육부가 학부제 실시에 강한 의지를 보인다는 점, 학내 여론이 긍정적이라는 점 등이 있었다.

이러한 본부의 방침이 알려진 가운데, 1994년 9월 1일 자연과학대학은 현행 11개 학과를 물리학부, 화학부, 생명과학부, 수리정보과학부, 지구환경과학부 등 5개 학부와 천문학과, 대기학과 2개 학과로 통폐합하기로 결정하고, 이듬해 1995학년도 입시부터 이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또 학부로 통합하면 전공 취득 필수 이수 학점을 하향 조정하고, 복수 전공제를 도입하여 학생의 자유로운 전공 선택을 유도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자연과학대학을 필두로 공과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등에서도 학부제 실시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학부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제기되었다. 먼저 대학원 중심 대학을 위해 학부제를 추진하면서, 막상 학부 과정의 교육·행정 편제들만 생각하지 대학원의 편제나 여건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공과대학처럼 학문적 유사성이 많은 대학들은 학과를 쉽게 통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대학의 경우 학부제 실시가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 무엇보다 학생 측은 학부제 실시를 위한 논의가 폐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강하게 반발하였다.

이러저런 논란이 있었지만, 본부는 학부제 시행 계획을 꾸준히 추진하여, 1994년 12월에 공개된 「서울대학교 2000년대 미래상」에도 반영하였다. 「서울대학교 2000년대 미래상」은 ‘대학원 중심 대학’이라는 목표를 이어받아, 대학원 정원 확대와 학부 정원 축소 정책 그리고 학부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다.

## 2) 학부제와 모집 단위 광역화 추진과 갈등

### (1) 학부제 시행

1995년을 기점으로 서울대학교의 학부제 구상은 새로운 양상을 보인다. 그때까지 서울대학교가 대학원 중심 대학을 목표로 한 내부적 필요로 학부제를 추진하였다면, 이때부터는 교육부가 이를 더욱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양상으로 바뀐 것이다.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 대학들은 지나치게 학과를 세분하여 과를 증설하는 경향이 있었다. 학과 설치를 학생과 교수를 충원하는 방편으로 활용하여 양적 팽창의 수단으로 삼기도 하였고, 전공 이기주의 때문에 새로운 학문 분야 도입이 어려워 아예 새로운 학과를 신설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전공 교육의 편협성과 기초 전공 교육 제한, 교과목 중복 운영, 교수 강의 부담 과다, 졸업생 취업과 진로 제한 등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인문·사회계나 예·체능계보다 특히 이공계에서 두드러졌다. 이에 정부는 1988년부터 학과 통합을 권장하여 왔으나 그 실적은 매우 미미하였다.

물론 ‘백화점식 학과 조직’이 부정적 기능만 한 것은 아니었다. 해방 직후, 그리고 이후 산업화 과정에서 전문 인력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을 때, 이러한 체제는 비교적 단기간에 각계의 전문 인력을 양산하기에 적합하였다. 서울대학교 역시 다양한 과를 보유하여 사회 발전에 필요한 각계의 인재를 양성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고도의 구조적 분화와 복잡한 기능적 상호 의존을 특징으로 하는 시대에는 이러한 체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었다.

1995년 3월에 교육부는 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하여 학부제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1995년 5월 31일, 교육부는 ‘신교육체제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안은 “정보화와 세계화”를 시대적 흐름으로 파악한 김영삼 정부가 이에 대한 교육 부문의 대책 방안으로 제시한 것이었는데, “사회 각 분야가 요구하는 다양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인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대학 모형을 다양화하고 특성화”하는 것을 주요 개혁 과제로 내걸었다. 그리고 대학 모형의 예로 제시한 여러 유형 중 아래와 같이 학부제와 관련한 구상이 있었다.

- 학부과정에서 학과 소속 없이 폭넓은 교육 이수 후 대학원과정에서 특정 연구를 수행하여 학자 및 전문 연구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예: 미국의 University College).
- 몇 개의 학문 분야를 복합적으로 구성하여 전공하게 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의 관리자를

양성하는 대학(예: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PPE(Philosophy, Politics & Economics), EEM(Engineering, Economics & Management) 등).

- 학생은 학부 학과에 소속되어 있으나 필수 전공 이수 학점을 최소화하여 소속 학부 학과에 관계없이 학생의 희망에 따라 다전공 복합 학문 연구가 가능한 대학.

학부제의 종류에는 학과 중심형 학부제, 커리큘럼형 학부제, 단과대학형 학부제, 계열형 학부제, 통합형 학부제, 탈 계열 학부제 등 여러 형태가 존재하는데, 실제 교육부가 추진한 학부제는 주로 학과의 통폐합 작업이었다. 그러나 교육부가 학부제에 대한 엄밀한 개념을 제시하지 않았고, 각 대학도 학부제의 개념적 구분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은 채 학부제를 추진함에 따라 혼란이 발생하였다.

교육부는 공급자 중심 교육, 획일화된 교육, 폐쇄적·단편 교육에서 학습자 중심 교육, 다양화된 교육, 개방적·열린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한 교육 개혁 작업의 하나로 학부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상 교육부의 학부제 정책은 세계화·개방화라는 이름으로 국내외에서 날로 심해지는 경쟁에 직면한 산업계가 대학에 요구한 사항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정보화 사회의 대학은 2~3년 안에 바뀔 수 있는 세부적인 전공을 가르치기보다는 폭넓게 가르쳐서 학생들이 졸업 후 직업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로 양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교육부 담당 관료의 언급에서 잘 드러난다. 이러한 생각은 정부가 사회 각 분야에 경제 논리를 적용하는 것에 골몰하여 교육 분야에도 이를 적용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교육부가 학부제 추진 계획을 발표하자 각 대학들은 앞 다투어 학부제 도입을 서둘러 외형상으로 학부제 계획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 발표 1년 만에 745개 학과가 246개 학과로 축소 조정되었고, 1997년 현재 전국 94개 대학이 1,041개 전공 영역에서 413개 학부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학과 통폐합이라는 개혁 방안이 대학 자율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급격한 변화를 추구함에 따라 곳곳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는 서울대학교도 마찬가지였다.

본래 학부제 시행을 위해서는 교과 과정 등의 학사 운영 체제, 학부제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행정 체제, 그리고 대학 전체의 구조적 틀 속에서 학부제가 차지하는 위상과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 대학의 현실을 감안한 충분한 연구와 검증을 거쳐 구성원들의 합의 하에 점진적으로 학부제를 도입·시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교

육부가 유사 학과의 통폐합 실적을 행정·재정 지원의 평가 대상으로 삼는 등 사실상 학부제를 ‘권장’이 아니라 ‘강제’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상은 실현될 수 없었다. 충분한 협의가 없었기에 구성원들 사이에 갈등을 빚기도 하였고, 내적 준비를 미처 완료하지 못한 상황에서 실적 위주로 학부제를 도입하여 형태상으로는 학부제인 경우도 있었다.

또한 과연 서울대학교가 다른 대학과 같이 일률적으로 학사과정을 학부제로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정부는 교육 개혁안에서 학문 연구 중심 대학, 교양 중심 대학, 전문가 중심 대학, 관리 중심 대학과 같은 대학 모형을 제시하고 각 대학이 각각 특성에 맞게 선택하게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막상 교육부는 여러 대학이 역할과 특성에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학제 개편을 실행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대학교는 아무래도 학문 후속 세대 양성의 역할을 타 대학보다 훨씬 많이 담당하고 있는데, 이런 서울대학교와 직업 교육을 위주로 하는 대학에 동일하게 학제를 시행하려는 것은 무리였다.

서울대학교 내에서도 학문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학부제 시행이 절실하고 용이한 분야와 그렇지 않은 분야를 구별하여 접근하는 것이 필요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가령 문과 계열 대학에서 학부제 논의는 큰 호응을 얻지 못했고, 실제 학과 통합 위주의 학부제를 실시한 곳도 많지 않았다. 그나마 1995년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와 국제경제학과가 학부과정과 대학원과정을 모두 경제학부로 통합하였다. 1991년 경제학과와 국제경제학과 양과의 합동 교수회의가 경제학부기획발전을 설립해 3년 간의 준비 과정 끝에 이룬 결실이었다. 또 1997년 법과대학에서 법학부가 출범하였다. 1982년 법학과를 공법학과와 사법학과로 분리하였다가 16년 만에 다시 통합한 것이었다. 가정대학은 1997년 생활과학대학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는데, 이때 소비자 아동학과를 소비자·아동가족학과군으로 개편하고 농업생명과학대학의 농가정학과를 편입하였다. 그리고 1998년 소비자·아동가족학과군과 농가정학과를 소비자 아동학부로 통합하였다. 예체능계에서는 미술대학이 1998년 공예과와 산업디자인과를 합하여 디자인학부를 출범시켰다.

인문대학은 학부제 도입을 둘러싸고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1994년 9월 2일에 전체 교수회의에서 모집 정원의 30%를 인문학부로 모집하고 학부 강좌를 따로 마련하는 안을 논의했으나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그러다 1995년 8월 9일, 이듬해부터 학과 단위는 대학원에서만 유지하고 단과대학 전체가 학부가 되는 단일 학부 형태로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원만하지 못한 도출 과정이 문제가 되었고, “수험생에게 혼

〈표 3-2-12〉 자연과학대학·공과대학·농과대학 학사과정의 학부제 진행 과정

단과대학	내 용	시행 연도
자연과학대학	지질학과, 해양학과를 지질·해양학과군으로 통합	1995
	수학과, 계산통계학과를 수학·계산통계학과군으로 통합	1995
	생물학과, 분자생물학과, 미생물학과를 생물·분자생물·미생물학과군으로 통합	1995
	자연과학대학 신입생을 '단일 학부' 로 모집	1996
	학과, 학과군을 모두 자연과학부로 통합	1998
	자연과학부를 수리과학부, 통계학과, 물리학부, 화학부, 생명과학부로 분리	2003
공과대학	학사과정 입학 정원에 '전기·전자·제어공학군' 을 신설	1992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계측제어공학과를 전기공학부로 통합	1995
	금속공학과, 무기재료공학과를 재료공학부로 통합	1995
	기계공학과, 기계설계학과, 항공우주공학과를 기계·기계설계·항공우주 공학과군으로 통합	1995
	공업화학과, 섬유고분자공학과, 화학공학과를 공업화학·고분자공학·화학 공학과군으로 통합	1995
	자원공학과, 토목공학과를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로 통합	1997
	기계·기계설계·항공우주공학과군을 기계항공공학부로, 공업화학·섬유 고분자·화학공학과군을 응용화학부와 섬유고분자공학과로 변경	1998
	섬유고분자공학과를 재료공학부로 통합	2000
	컴퓨터공학과와 자연과학대학 전산학과를 통합, 컴퓨터공학부로 개편 응용화학부를 화학생명공학부로 변경	2000 2005
농업생명 과학대학	농학과, 원예학과를 식물생산과학부로 통합	1997
	농공학과, 임산공학과, 천연섬유학과를 생물자원공학부로 통합	1997
	농화학과, 농생물학과를 응용생물화학부로 통합	1997
	농경제학과, 농업교육과(농촌 사회 교육 전공)를 농경제사회학부로 통합	1997
	산림자원학과, 임산공학과를 산림과학부로 통합	2004
	농산업교육과를 식물생산과학부로 통합	2005
	생물자원공학부 소속 농업 기계학 전공, 천연 섬유학 전공을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로 변경	2005
	생물자원공학부 소속 농업 토목학 전공, 조경학과를 조경·지역시스템공학 부로 변경	2005
	식품공학과, 동물자원공학과를 식품·동물생명공학부로 통합	2005



란을 주고,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너무 미흡하다”는 이유로 한 달 뒤 열린 회의에서 시행을 1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또 그해 11월 25일에 인문대학 교수 80명이 ‘인문대학 단일 학부제안에 관하여’라는 성명서를 인문대학 학장에게 제출하였다. 이들은 “현행 학부제 논의가 궂모양 갖추기에만 급급하다”며, “내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부제가 이루어지면 시행착오의 위험이 커진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인문대학은 학과 통합과 같은 학부제는 실시하지 않았고 2002학년도부터 모집 단위 광역화를 시행하고 있다.

문과나 예체능계과 달리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농과대학은 비교적 학부제 취지에 대한 동의나 찬성도가 높았고, 공과대학처럼 자발적으로 학과 통합을 추진한 경우도 있었다. 여기서는 학부제 도입 자체에 대한 반대보다는 주로 불충분한 의견 수렴과 같은 방법상 문제와 준비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예를 들면 자연과학대학은 1996년부터 단일 학부로 모집하기로 결정을 했으나, 1995년 말까지도 교육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시행 내용을 결정하지 못한 상태였다. 공과대학도 유사 계열이 아닌 과들을 모아 놓고 한 지붕 밑에 여러 살림을 차린 모양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럼에도 대체로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농과대학에서는 <표 3-2-12>와 같이 학부제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2006년 현재 서울대학교의 교육 기구 편제를 표로 나타내면 <표 3-2-13>과 같다. 표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듯이, 학과 통합을 위주로 하는 학부제는 주로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에서 많이 시행되어 일부 특수한 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학부 체제로 전환하였다. 이들 단과대학에서는 학부제를 통해 학생들의 전공 선택 폭이 넓어지고 교수들의 학과 간 교류도 많아졌다는 등 학부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이 많다. 이에 비해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사범대학 등 학부제 도입 과정에서 진통이 많았던 곳은 현재까지 대부분 학부를 구성하지 않고 과 체제를 고수하여 대조를 보인다. 참고로 1997년 5월, 사회과학대학의 신문학과는 언론정보학과로 과 이름을 변경하였다.

## (2) 모집 단위 광역화 시행

전국적으로 학부가 학과를 대치하여 대학의 기본 교육 단위가 되는 가운데,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학부제와 더불어 모집 단위 광역화 바람이 불었다.

1998년 2월 정부는 ‘고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대학의 학생 모집 단위는 복수

〈표 3-2-13〉 2006년 현재 교육 기구 편제

단과대학 (학부 또는 학과 수)	학 과
인문대학(학과14)	국어국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불어불문학과, 독어독문학과, 노어노문학과, 서어서문학과, 언어학과, 국사학과, 동양사학과, 서양사학과, 철학과, 종교학과, 미학과
사회과학대학 (학부 1, 학과 8)	정치학과, 외교학과, 경제학부, 사회학과, 인류학과, 심리학과, 지리학과, 사회복지학과, 언론정보학과
자연과학대학(학부 5, 학과 1, 예과 3)	수리과학부, 통계학과, 물리학부, 화학부, 생명과학부, 지구환경과학부, 의예과, 치의예과, 수의예과
간호대학(학과 1)	간호학과
경영대학(학과 1)	경영학과
공과대학(학부 6, 학과 4)	기계항공공학부, 재료공학부, 전기공학부,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컴퓨터공학부, 화학생명공학부, 건축학과 건축 공학 전공, 산업공학과, 원자핵공학, 조선해양공학과
농업생명과학대학(학부 7)	식물생산과학부, 산림과학부, 응용생물화학부, 식품·동물생명공학부,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농경제사회학부
미술대학(학부 1, 학과 3)	동양화과, 서양화과, 조소과, 디자인학부
법과대학(학부 1)	법학부
사범대학(학과 15)	교육학과,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불어교육과, 독어교육과, 사회교육과, 역사교육과, 지리교육과, 국민윤리교육과, 수학교육과, 물리교육과, 화학교육과, 생물교육과, 지구과학교육과, 체육교육과
생활과학대학(학부 1, 학과 2)	소비자아동학부, 식품영양학과, 의류학과
수의과대학(학과 1)	수의학과
약학대학(학과 2)	약학과, 제약학과
음악대학(학과 4)	성악과, 작곡과(작곡 전공, 이론 전공), 기악과(피아노 전공, 현악 전공, 관악 전공), 국악과
의과대학(학과 1)	의학과
치과대학(학과 1)	치의학과
총 16개 대학, 22개 학부, 58개 학과, 3개 예과	

비고: 1998학년도 1학기부터 수의과대학의 수학 연한이 6년으로 개편됨에 따라 수의예과 과정 설치.

의 학과 또는 학부로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또, 그해 6월에는 아래와 같이 모집 단위 광역화를 직접 언급한 ‘1999학년도대학생정원조정지침’을 내렸다.

- 학생들의 다양한 전공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백화점식 학과 설치에서 탈피, 비교 우위의 전문화 교육을 유도한다.
  - 유사 학과 통폐합, 특성화 유도.
- 모집 단위는 학문의 유사성 및 연계성을 감안하여 광역화하여야 한다.
- 대학은 모집 단위 광역화와 함께 연계 전공 등 학사 모형의 다양화를 추진해야 한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학부제’와 ‘모집 단위 광역화’는 서로 다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모집 단위 광역화란 기존의 학과 단위가 아닌 두 개 이상의 학과를 한 단위로 하여 학생을 모집하는 제도로, 이는 학생 모집을 위한 기술적인 개념이다. 반면에 학부제는 전공의 성격이 유사한 학과들끼리 묶어 좀 더 큰 학과를 만드는 형태로 교육 과정의 구조에 관한 개념이다. 그러나 그동안 이 두 개념을 혼동하여 사용함으로써 제도 개편에 상당한 혼선을 빚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데는 교육부의 책임도 없지 않았다. 1995년 5월 31일에 김영삼 정부의 교육개혁위원회가 제시한 개혁안의 학부 개념은 미국에서 연구 중심 대학의 학부를 의미하는 ‘유니버시티 칼리지(University College)’ 개념이었던 것에 반해, 그 후 교육부가 권고한 학부제에서 ‘학부’는 주로 ‘두 개 이상의 유사 학과를 통합한 대규모 학과 개념’이었다. 교육부조차 엄격한 개념을 세우지 못한 상태였기에, 대학 내부에서 이에 대해 혼돈이 있었다. 이때부터 교육부는 학부제 대신 주로 모집 단위 광역화를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나 이 둘을 모두 포괄적 의미의 학부제라고 표현한 경우도 많았다.

모집 단위 광역화는 김대중 정부의 교육 개혁 작업과 깊은 관련이 있었다. 김대중 정부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질적으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교육개혁의 목표로 삼고, “세계적 수준의 대학원 중심 대학 육성 사업”을 중대 과제로 설정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대학을 연구에 중점을 두는 ‘대학원 중심 대학’과 학사과정 교육에 중점을 두는 ‘학부 중심 대학’의 이원적 체제로 개편하여 소수의 연구 중심 대학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이렇듯 대학원 중심으로 구조 조정을 하려 함에 따라 학부과정을 교양 과정으로 설정하고 대학원에서 전공 심화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학부제와 모집 단위 광역화를

시행하려는 정부 의도였다. 정부는 “백화점식 학과 개설과 산업계의 수요와 괴리된 경직된 교육 과정으로는 국가 경쟁력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교육계와 산업계 간의 긴밀한 관계”, “국가·사회적 요청에 기여하는 대학”을 강조하였다. 상대적으로 학문의 실용성과 응용성을 강조하는 이러한 발상이 결국 모집 단위 광역화 시행으로 이어진 측면이 있었다.

김대중 정부가 취한 이러한 교육 개혁 정책은 경쟁을 강조하고 수요자 중심주의와 같은 소위 ‘시장 경제의 원리’를 교육 부문에 적용하려 한다는 점에서 김영삼 정부가 추진한 교육 개혁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김대중 정부는 1997년 하반기 외환 위기를 계기로 김영삼 정부부터 감지하기 시작한 세계화와 개방화의 흐름을 더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그것을 공공연히 천명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는 점이 달랐을 뿐이었다.

교육부의 학부제와 모집 단위 광역화 정책은 ‘두뇌한국21(BK21)’ 사업을 계기로 더욱 강한 힘을 발휘하였다. 교육부는 ‘두뇌한국21’ 사업의 목적으로 연구 중심 대학 육성과 학문 후속 세대 지원을 내세웠지만, 사업 참여 조건으로 학부제와 모집 단위 광역화를 시행할 것을 내걸었다. 이에 서울대학교도 1998년 9월 ‘두뇌한국21’ 사업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학부 정원 감축, 학부제 시행, 모집 단위 광역화 등을 시행하기로 약속하는 구조 조정안을 교육부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구조 조정안을 마련하는 기간이 매우 짧고 의견 수렴 과정이 충분치 않아 교수, 학생 등 학내 구성원들의 반발이 매우 컸다.

먼저 1998년 7월 6일에 이해찬 교육부 장관과 선우중호 총장이 업무회의에서 서울대학교를 연구 중심 대학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이틀 뒤인 7월 8일에 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서울대구조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산하에 서울대구조조정실무위원회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8월 4일에는 실무 위원들이 제시한 초안을 서울대구조조정위원회가 심의하고 총장이 승인하였고, 6일에 각 교수들에게 전달하였다. 한편, 9월 2일에 학부 중심으로 모집 단위를 설정하도록 학칙을 개정하였는데, 이는 그 해 2월 교육부가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이를 서울대학교 학칙 및 하위 규정에 반영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었다. 9월 14일에 ‘서울대학교 학사 조직 개편 및 입학 전형 제도 개선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15일의 학장회와 16일의 평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교육부에 제출하였다.

그 뒤 학교 당국이 구조 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지 않은 가운데 정부는 1999년 3월의 ‘교육 발전 5개년계획’, 2000년 12월의 ‘국립대학 발전계획’에서 지속적으로

학부제와 모집 단위 광역화를 포함하는 구조 조정 계획을 발표하였다. 특히 국립대학 발전계획은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국립대학 구조조정계획’을 수정·계승한 것으로, “국립대학의 중복적인 학과 개설로 인한 과잉 인력 양성, 경직된 조직 및 재정 운영 등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증대하였다”고 명시하였다.

2001년 3월에 본부가 모집 단위를 광역화한 2002년 신입생 전형 계획을 발표하는 등 모집 단위 광역화 실현이 바로 눈앞에 다가오자 학내에서 모집 단위 광역화가 다시 논쟁의 중심으로 부상하였다. 그리고 교수 사회와 학생 사회 모두에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분출하였다. 그해 5월 18일에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교수들이 성명서를 통해 지적하였듯이 무엇보다 “시장 원리에 입각한 교육 개혁의 바람 속에 기초 학문이 흔들릴 것”을 걱정하는 의견이 많았다. 학생들에게 자유로운 전공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폭넓은 교양 교육을 실시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앞서 1974~1984년에 시행한 계열별 모집 때 발생한, 특정 학과에 대한 편중과 거부 현상이 반복될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었다. 또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 수용 인원을 제한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는 결국 학생의 전공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었다. 또 건축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커리큘럼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아 부작용만 발생할 것”이란 견해가 대다수였듯이 준비 부족과 졸속 시행도 문제로 꼽혔다. 그 외에도 대학 교육의 질적 저하, 학업 성취도의 저하를 걱정하는 의견이 있었다.

학교 측은 이에 대해 입학 정원의 30%를 과별 모집 형태인 수시 모집으로 선발하고 전공 예약제를 실시할 것 등을 대책으로 제시하였다. 정부는 전공 예약제가 ‘두뇌한국21’ 사업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반발하였으나 서울대학교는 기초 학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현재까지 이를 계속 시행하고 있다. <표 3-2-14>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전공 예약제 시행 분야와 인원이다.

<표 3-2-14>에 의하면 2004학년도에 전공 예약으로 모집하는 인원이 대폭 줄었는데, 이는 이해부터 모집 단위 광역화로 인한 부작용을 극복하고자 모집 단위를 보다 세분화했기 때문이다. 가령 2003학년도에 전공 예약 모집을 시행했던 사회과학대학의 인류학과·지리학과는 2004학년도부터 아예 인류·지리 학과군을 분리하여 별도로 모집했다.

2002학년도에 모집 단위 광역화로 처음 입학한 학생들이 본격적으로 전공 선택을 시작한 2003년, 우려한 대로 일부 인기 학과에 편중되는 현상이 여실히 드러났다. 전공 진입 신청을 받은 결과 인문대학은 15개 학과 중 국어국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영어영문

〈표 3-2-14〉 전공 예약제 시행 분야 및 인원(2002~2006년)

(단위: 명)

대학	구분	전공 예약제 시행 분야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인문대학		불어불문학	10	10	7	8	10
		독어독문학	10	10	7	8	10
		노어노문학	8	8	7	8	10
		서어서문학	8	8	6	8	10
		언어학	8	8	6	8	10
		종교학	-	8	6	8	8
		계	44	52	39	48	58
사회과학대학		인류학	10	10	-	-	-
		심리학	10	10	-	-	-
		지리학	10	10	-	-	-
		사회복지학	10	10	13	10	10
		계	40	40	13	10	10
자연과학대학		천문학	10	-	-	-	-
		대기과학	10	-	-	-	-
		지구시스템과학	10	-	-	-	-
		해양학	10	-	-	-	-
		계	40	-	-	-	-
공과대학		건축공학	10	10	10	10	13
		산업공학	15	15	15	14	18
		원자핵공학	15	15	15	14	18
		조선해양공학	20	20	20	18	25
		계	60	60	60	56	74
농업생명 과학대학		식물생산과학	16	16	-	-	-
		산림자원학	10	10	-	-	-
		동물자원과학	10	10	-	-	-
		천연섬유학	10	10	-	-	-
		계	46	46	-	-	-
사범대학		독어 교육	10	10	10	8	8
		불어 교육	10	10	10	8	8
		교육학	6	6	-	-	-
		사회 교육	8	8	-	-	-
		역사 교육	8	8	-	-	3
		지리 교육	8	8	8	7	7
		계	50	50	28	16	16

〈표 3-2-14〉 계속

대학	구분	전공 예약제 시행 분야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국민 윤리 교육	8	8	-	-	-
		물리 교육	8	8	-	-	-
		화학 교육	8	8	-	-	-
		생물 교육	8	8	-	-	-
		지구과학 교육	8	10	8	7	7
		계	90	92	36	30	33
	계		322	290	148	144	175

비고: 『서울대학교백서 2002~2003』(43쪽)과 모집 안내 책자를 참조하여 작성.

학과에 지원 학생 중 62%가 물렸고, 노어노문학과, 종교학과는 지원 학생이 1명뿐이었다. 사범대학은 수학 과학교육계의 5개 학과 중 수학교육과에 55%의 학생들이 지원했으나 지구과학교육과에는 단 1명만이 지원했다. 농업생명과학대학은 대부분 학과에 모집 정원보다 훨씬 적은 학생들이 지원한 가운데 식품공학과에만 50명이 지원해 정원의 2배가 넘는 지원율을 보였다.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모집단위 광역화는 매년 모집 단위를 변경하고 전공 배정 기준을 수정하며 그 큰 틀은 그대로 유지된 채 시행되고 있다.

### 3) 학부 대학(University College) 구상과 전문 대학원 설치

#### (1) 학부 대학(University College)과 전문 대학원 구상

1994년에 만들어진 「서울대학교 2000년대 미래상」은 비록 간단한 문구지만 ‘대학원 중심 대학 운영의 기본 방향’에서 ‘학부제 또는 학부 대학 설치 운영(학부 학생 정원 축소)’이라 하여 처음으로 학부 대학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서울대학교가 학부 대학의 구체적 구상을 본격적으로 제시한 것은 1998년 2월 「서울대학교 장기발전구상」이었다. 이 안은 당시 대학원의 문제점으로 “대학원 중심 대학에 걸맞지 않은 학사과정 중심의 교육 체제”와 “미약한 역할만 하고 있는 전문 대학원”을 꼽았다. 서울대학교가 오래전부터 대학원 중심 대학을 발전 방향으로 표방했으나 학생 수나 교수들의 활동에서 여전히 대학원과정보다는 학사과정 교육이 중심적 위

〈표 3-2-15〉 2002~2006학년도 정시 모집의 모집 단위

단과대학	2002	2003	2004년	2005년	2006년
인문대학	인문대학 (광역모집)	인문대학 (광역모집)	인문계열1, 인문계열2	인문계열1, 인문계열2	인문계열1 인문계열2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광역모집)	사회과학대학 (광역모집)	사회과학계열, 인류·지리학과군	사회과학계열, 인류·지리학과군	사회과학계열, 인류·지리학과군
자연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광역모집)	수학통계계열, 물리학부, 화학부, 생명과학부, 지구환경과학계열	수학·통계학계열, 물리학부, 화학부, 생명과학부, 지구환경과학계열	수리과학부·통계학과군, 물리학부, 화학부, 생명과학부, 지구환경과학부	수리과학부·통계학과군, 물리학부, 화학부, 생명과학부, 지구환경과학부
공과대학	공학계, 건축학과 건축학전공	기계항공공학부, 응용과학부, 전기컴퓨터공학부, 재료공학부,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공학계열, 건축학과건축학전공	기계항공공학부, 응용과학부, 전기공학·컴퓨터공학계열, 재료공학부,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공학계열, 건축학과건축학전공	기계항공공학부, 화학생물공학부, 전기공학부·컴퓨터공학부군, 재료공학부,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공학계열, 건축학과건축학전공	기계항공공학부, 화학생물공학부, 전기공학부·컴퓨터공학부군, 재료공학부,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공학계열, 건축학과건축학전공
농업생명과학대학	인문계, 자연계, 사범계	인문계, 자연계, 사범계	농경제사회학부, 농업생명과학계열1, 농업생명과학계열2, 생물자원공학부, 농업산업교육과	농경제사회학부, 식물생산·산림과학부군, 농생명공학계열, 바이오시스템조경학계열	농경제사회학부, 식물생산·산림과학부군, 농생명공학계열, 바이오시스템·조경학계열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동양화과, 서양화과, 조소과	디자인학부, 동양화과, 서양화과, 조소과	디자인학부, 동양화과, 서양화과, 조소과	디자인학부(공예), 디자인학부(디자인), 동양화과, 서양화과, 조소과	디자인학부(공예), 디자인학부(디자인), 동양화과, 서양화과, 조소과
사범대학	어문교육계, 인문·사회교육계, 수학·과학교육계, 체육교육과	어문교육계, 인문·사회교육계, 수학·과학교육계, 체육교육과	국어교육과, 외국어교육계, 인문교육계, 사회교육계, 수학교육과, 과학교육계, 체육교육과	국어교육과, 외국어교육계열, 교육학·국민윤리교육과군, 사회교육계열, 수학교육과, 과학교육계열, 체육교육과	국어교육과, 외국어교육계열, 교육학·국민윤리교육과군, 사회교육계열, 수학교육과, 과학교육계열, 체육교육과
생활과학대학	인문계, 자연계	인문계, 자연계	인문계, 자연계	소비자아동학부, 의류·식품영양학과군	소비자아동학부, 의류·식품영양학과군
음악대학	성악과, 작곡과, 기악과, 국악과	성악과, 작곡과, 기악과, 국악과	성악과, 작곡과, 기악과, 국악과	성악과, 작곡과, 기악과, 국악과	성악과, 작곡과, 기악과, 국악과

비고: 각 학년도 「모집 안내」 책자를 참고하여 작성.



치를 차지한다는 지적이었다. 또 전문 대학원이 3개 밖에 설치되지 않아 고급 전문 직업인 양성이라는 대학의 주요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그 위상과 비중이 너무 작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대학원 위상 강화와 함께 전문 대학원 활성화를 위한 주요 개편안을 제시하였는데, 그중 하나가 교육 수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점차 높아 가는 경영학·법학·의학·치의학·분야의 전문 대학원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었다.

학사과정 교육 단위에 대해서는 대학원보다 더욱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였는데, 학과의 지나친 세분화, 학문 분야의 성격이 반영되지 않는 교육 조직, 학과 간 높은 장벽으로 인한 학생 선택권 제한, 학사과정 교육의 편협성, 사회의 인력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학과별 학생 정원, 단일한 분야에 대한 기존 전문지식의 전수어나 적합한 교육 체제 등이 그것이었다. 그리고 이를 개편할 방안으로 제시한 것이 학부 대학 설치였다.

학부 대학에는 대학원의 모든 학과를 그대로 다 설치하지 않고 학과 대신 영역(또는 계열)을 두며, 주로 기초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전공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된 교과 과정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또 한 영역(또는 계열) 내에서 학생들이 복수 전공을 할 수 있도록 옥스퍼드대학의 ‘철학, 정치학, 경제학 연계 과정(PPE: Philosophy, Politics & Economics)’ 과 같이 서로 다른 분야를 적절히 결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을 계획하였다. 단, 전문 대학원에서 가르칠 내용은 개별 교과목으로 제공하되 독립된 전공으로 선택하는 일은 없도록 한다고 하였다. 또, 예술 계열 교육이나 4년 학사과정 교육이 특별한 자격증 획득(예: 간호사, 영양사)과 연계되어 있는 완성 교육일 경우 예외를 인정하였다.

이상의 「서울대학교 장기발전구상」이 생각하는 교육 단위 구상을 도식으로 나타내면 <그림 3-2-3>과 같다.

그러나 「서울대학교 장기발전구상」의 안은 「서울대학교 장기발전계획」(2002~2011년)(이하 「장기발전계획」)에서 “교육과 학생 지도의 측면에서 현실성이 떨어지며 지나치게 이상적이다”란 평을 들어야만 했다. 「장기발전계획」 역시 “학과 간의 높은 장벽을 허물고 학사 과정에서 폭넓은 기초 분야의 교육을 실시하며, 사회의 인력 수요에 맞추어 공급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기본 방침에는 동의하였다. 다만 그와 같은 교육 효과를 살릴 수 있으면서도 실현 가능한 현실적 방안을 모색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장기발전계획」은 서울대학교 편제와 관련한 기존 안들의 상황 인식과 대안을 다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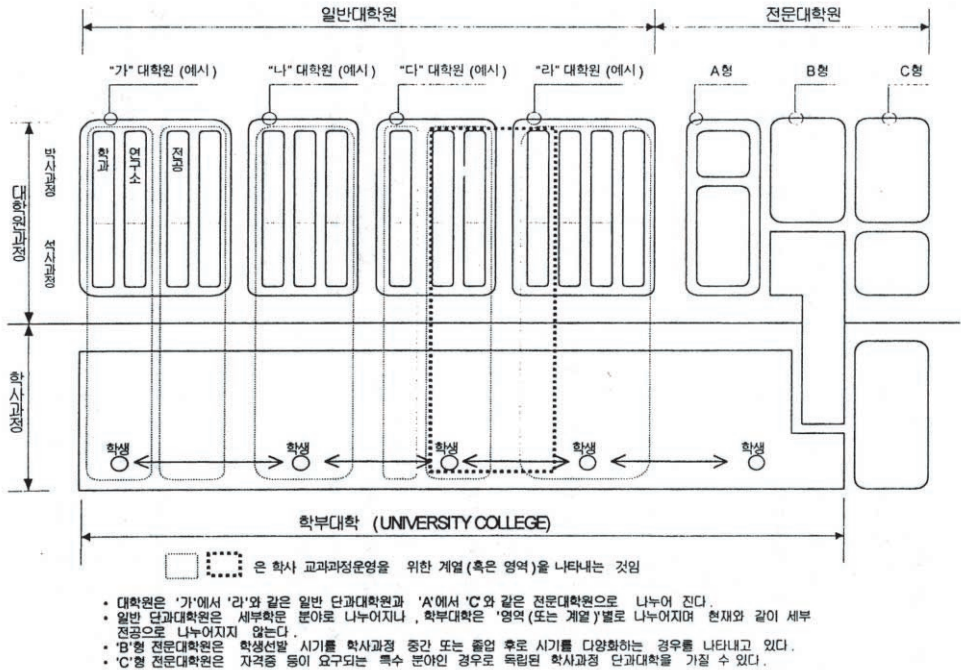


그림 3-2-3 「서울대학교 장기발전계획」의 학부대학, 일반 대학원, 전문 대학원 개념도

과 같이 정리하였다.

기초 학문의 토대 위에 응용 학문이 추구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기초 학문과 응용 학문 중 하나를 선택케 함으로써 양자 모두 내실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이 대학의 중핵으로 자리하며(Faculty of Arts and Sciences), 그것을 둘러싸고 응용 분야의 대학 및 전문 대학원 (Faculty of Engineering, Faculty of Law, Faculty of Medicine)이 유기적인 관계 속에 각각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편제를 만든다.

장기발전계획은 기초 학문 대학을 통합하려는 기존 안의 발상은 곧 과거 문리과대학의 부활과 같은 것이며, 이를 위해 학내의 광범위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리고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학문적 결합은 절실히 필요하지만, 자연 과학의 발전을 위해 이러한 편제 개편이 반드시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 대신 “교육 과정을 어떻게 설계하느냐, 대학생들에게 공통적으로 부과되는 교양

교육을 어떻게 제공하느냐, 단기간의 가시적인 결과에 좌우되지 않고 기초 학문 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학문 정책이 대학 내에 얼마나 정착하느냐”에 따라 위의 통합이 구상하는 교육 효과를 충분히 도출해 낼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제도 개편에 소모될 에너지를 오히려 이런 과제의 해결에 쏟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결국 장기발전계획이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한 방안은 의과대학, 치과대학, 법과대학, 경영대학을 전문 대학원으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다만 제반 여건의 미성숙과 학사과정 졸업자의 사회적 수요가 많은 현실을 이유로, 의과대학과 경영대학을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는 것에는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2004년 2월에 본부가 작성한 「학사구조개선 기본 방향에 관한 연구」는 1987년 외환위기 이후 학생들이 의학과 법학 등 인기 학문을 선호하는 현상이 더욱 심화하면서 대학 교육이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을 목도하는 가운데 작성하였다. 이 안은 현재까지 가장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학부 대학 구상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비록 학교의 공식 입장으로 채택되지는 않았으나 최근 학내에서 의욕적으로 추진된 일련의 학사 구조 개편 작업은 대체로 이 틀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부인하기 힘들다.

「학사구조개선 기본 방향에 관한 연구」의 상황 진단에서 특이한 점은 지금까지 정부나 대학이 대학원 중심 대학 육성을 표방하면서 그 개념을 분명히 하지 않거나 오해하여, 대학원을 기존의 이른바 일반 대학원과 동일시하였다고 지적한 점이다. 따라서 그동안 일반 대학원은 괄목할 만한 양적 팽창을 이루었으나, 사회적 수요가 별로 없는 박사의 양산을 가져왔으며, 그 결과 개인의 좌절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막대한 인력 낭비와 손실을 초래했다고 하였다. 그런 다음 대학원 중심 교육이란 학사과정의 졸업생들을 각계의 고급 전문 인력으로 양성해 내는 교육으로, 이는 일반 대학원의 양적 팽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종류의 대학원과정 창설로 이어져야 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생각의 바탕에는 학사과정으로 완결되는 전문 교육으로는 현대 사회의 전문 인력이 갖추어야 할 소양과 지식을 두루 갖춘 인재를 교육할 수 없다는 생각이 있었다.

「학사 구조 개선 기본 방향에 관한 연구」가 결론 및 대안으로 제시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현 학사 구조의 결함과 이것이 가져오는 폐단을 시정하고, 최고의 교육 연구 기관으로서의 소명을 다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는 학사 조직의 기본 틀을 학사과정과 일반 대학원으로

구성되는 기존의 이원(二元) 체제에서 학사과정의 학부 대학, 전문 대학원, 그리고 일반 대학원의 삼원(三元) 체제로 개편해야 한다. …… 각 영역의 전문 대학원은 각 지역이 요구하는 고급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일반 대학원은 학문 후속 세대의 양성을 책임져야 한다. 이러한 체제만이 사회적 유인 체계가 대학과 학문을 유리하는 것을 막고,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전문 인력의 고급화를 기할 수 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학부 대학의 조직, 교육 연한 및 교육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였다.

- 교육 범위: 현재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이 담당하고 있는 기초 학문 분야.
- 교육 단위: 학문의 성격상 통합 가능한 과들을 통합하여 창설되는 학부(division 또는 faculty)를 교육 단위로 한다.
- 학생 정원: 1200명 내지 1500명.
- 교육 연한: 4년
- 교육과정: 기초 교양, 선택 과목, 전공 교육으로 구성
- 학생 모집 제도: 학부 대학의 학생은 전공 구별 없이 통합 단위로 모집한다. 학생들은 일정한 학점을 이수한 후 전공을 선택한다. 다만 이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추진한다.
  - 제1단계: 중규모 교육 단위를 모집 단위로 하는 제도를 일정 기간 시행한다. 대략 3~5년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 단계는 전문 대학원의 창설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 제2단계: 인문·사회·자연 계열을 모집 단위로 하여 입학생을 선발한다. 역시 3~5년 간 실시한다.
  - 제3단계: 전체 학생을 단일 통합 모집 단위로 선발한다.

제23대 정운찬 총장 취임 후 대학 본부는 ‘학부 대학-전문 대학원 중심 체제’로의 개편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였다. 정운찬 총장 본인이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이를 밝히기도 하였고, 전체 학장회도 학부 대학-전문 대학원 중심 체제로 학사 구조 개편을 추진 중임이 드러났다. 하지만 본부 기획실 관계자가 “학부 대학-전문 대학원 체제는 학교의 공식적인 입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 수준”이라고 말한 것처럼, 학부 대학 구상은 여전히 학교 측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 그렇지만 학내의 많은 구성원들은

기초교육원의 위상 강화와 같은 단적인 사례를 통해 앞으로 서울대학교가 학부 대학-전문 대학원 중심 체제로 갈 것임을 예상하고 있다.

## (2) 전문 대학원 설치와 협동과정 대폭 증설

대체로 학부제·학부 대학에 대한 논의는 항상 전문 대학원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이루어졌다. 이는 학부제·학부 대학 시행이 전문 대학원 운영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서울대학교 학제 개편과 관련한 전문 대학원 도입 논의는 1987년 제출된 서울대학교 발전장기계획에서 처음 시작됐다. 이는 경영대학, 의과대학, 치과대학, 법과대학을 전문 대학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1994년의 '서울대학교 2000년대 미래상', 1998년의 서울대학교 장기발전구상, 그리고 2004년의 「학사 구조 개선 기본 방향에 관한 연구」에서 거듭 제기되었다.

그런데 전문 대학원 설치에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바이기도 했다. 일찍이 1995년 5월 31일 정부가 발표한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은 아래와 같이 전문 대학원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법조인·의사·성직자·교원 양성을 위한 전문 대학원 제도 도입: 학부 수준의 대학 교육이 이미 대중화되어 있는 고학력화 사회에서 법조인·의사·성직자·교사에게 요구되는 수준 높은 교양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외국의 전문가와 경쟁해야 하는 세계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조인 등의 전문 교육은 학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대학원 수준의 과정에서 실시한다.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은 이와 별도로 국제 관계 전문 요원 및 지역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 대학원 설치도 제안하였다. 이후 정부도 학부제 추진과 함께 전문 대학원 설치를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 대학원 도입은 여러 세력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고,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치의학, 의학, 경영학, 법학 등 4개 추진 대상 대학 가운데 이미 서울대학교에 설치된 것은 2005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받은 치의학 전문 대학원과 학부 과정의 존폐 여부 논란 끝에 결국 2006년 9월에 문을 연 경영 전문 대학원(MBA) 뿐이다. 의학 전문 대학원의 경우 입학 대상자 자격 선정 문제가 남아 있고, 법학 전문 대학원은 사법 고시 존폐 등의 사법 개혁 문제와 관련하여 아직 전망이 불투명하다.

한편, 서울대학교는 2003년 1월에 국제지역원을 국제대학원으로 개편하였다. 국제지역원은 1989년 설립된 지역종합연구소를 그 연원으로 하는데, 1997년 1월 국제지역원으로 바뀌었다가 이때 다시 전문 대학원 체제로 전환하였다.

전문 대학원의 설치와 함께 협동과정을 대폭 증설한 것도 최근 대학원 체제의 큰 변화이다. 서울대학교에 대학원 특정 학과와 다른 몇몇 학과의 전공 과정을 결합하는 형태의 협동과정이 생긴 것은 1975년에 음악·미술·상업·가정교육 전공을 설치한 것이 그 시초이다. 그 후 1980년대에 그 수가 조금 증가하다 1990년대 이후부터 그 수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다.

원래 대학원 협동과정은 기존 학과 간의 장벽을 허물고, 이들 학과들이 운영하는 커리큘럼에 포괄하기 어려운 영역의 교육과 연구를 여러 관련 학과가 '학제적으로'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설립하였다. 그리하여 설치 초부터 학문 변화가 가속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기존 단일 학과로는 다루기 힘든 분야를 다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협동과정은 양적 증가와 함께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심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산과 공간의 부족, 전임 교수 부족 등의 문제로 안정된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이다. 2006년 6월 현재 서울대학교는 석사과정 28개 전공, 박사과정 27개 전공의 협동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협동과정을 포함해 현재 서울대학교가 개설한 대학원 과정은 아래와 같다.

· 석사 및 박사과정 모두 개설

- 인문·사회계: 국어 국문학, 중어 중문학, 영어 영문학, 불어 불문학, 독어 독문학, 노어 노문학, 서어 서문학, 언어학, 국사학, 동양사학, 서양사학, 철학, 종교학, 미학, 고고 미술사학, 교육학, 국어 교육, 영어 교육, 독어 교육, 불어 교육, 사회 교육, 체육 교육, 국민 윤리 교육, 법학, 정치학, 외교학, 경제학, 경영학, 농경제 사회학, 사회학, 인류학, 심리학, 지리학, 사회복지학, 언론 정보학, 소비자학, 아동 가족학.
- 자연계: 수리과학, 통계학, 물리학, 화학, 생명 과학, 지구 환경 과학, 수학 교육, 과학 교육, 식물 생산 과학, 산림 과학, 농생명 공학, 바이오 시스템 소재학, 생태 조경 지역 시스템 공학, 농산업 교육, 식품 영양학, 의류학, 간호학, 약학, 제약학.
- 공학계: 건축학, 화학 생물 공학, 산업 공학, 원자핵 공학, 조선 해양 공학, 재료 공학, 기계 항공 공학, 지구 환경 시스템 공학, 전기 컴퓨터 공학.
- 예체능계: 음악과, 디자인 학부.
- 의학계: 의학, 치의학, 수의학.

- 협동과정: 인지 과학 전공, 서양 고전학 전공, 비교 문학 전공, 공연 예술학 전공, 과학사 및 과학 철학 전공, 유전 공학 전공, 뇌 과학 전공, 의용 생체 공학 전공, 생물 정보학 전공, 나노 과학 기술 전공, 계산 과학 전공, 기술 정책 전공, 기술 경영 전공, 생물 화학 공학 전공, 도시 설계학 전공, 농업 생물 공학 전공, 음악 교육 전공, 미술 교육 전공, 가정교육 전공, 방사선 응용 생명 과학 전공, 종양 생물학 전공, 임상 약리학 전공, 여성학 전공, 특수 교육 전공, 환경 교육 전공.
  
- 석사과정만 개설
  - 예체능계: 동양화, 서양화, 조소.
  - 협동과정: 기록 관리학 전공, 경영 교육 전공, 유아 교육 전공.
  
- 박사과정만 개설
  - 인문 사회계: 행정학, 환경 계획학.
  - 자연계: 보건학.
  - 예체능계: 미술학과.
  - 협동과정: 음악학 전공, 조경학 전공.



## 제3장 교과 과정의 정비

서울대학교의 교과 과정은 단지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교과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울대학교가 목표로 하는 인재상을 길러내는 과정이기도 하다. 특히 교양 과정은 개별 교육 단위를 넘어 전 대학에 걸쳐 적용한다는 점에서 대학 전체의 교육 목표와 깊은 관련이 있다. 이에 본 장은 주로 교양 과정을 중심으로 교과 과정 편제의 변화, 성적 평가 방식, 졸업 규정 등을 다룬다. 학부 전공과 대학원 교과 과정은 개별 교육 단위의 목표와 관련이 있는 데다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다.

교양 과정은 계열별 모집이나 광역단위 모집 등을 실시할 경우 전공 학습을 위한 ‘기초 과정’으로 불렸으며, 그렇지 않을 때도 관습적으로 기초 과정이란 용어를 계속 사용하였다. 용어의 문제는 교양 과정과 전공 과정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와 같은 문제와도 관련이 있으나, 본고는 일단 사용 당시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최근 10년 사는 대학 본부의 각종 연구보고서와 교과 과정 책자, 『대학신문』, 『대학백서』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그 이전의 내용은 주로 기존 교사를 요약·정리하고 재배치하였다.



## 제1절 초창기 교과 과정(1946~1961년)

### 1) 창립과 새로운 교과 과정 도입

서울대학교 창립 후 운영된 교과 과정이 일제 식민지기의 교육과 달라진 대표적 변화는 학년제에서 학점제로 전환한 것과 일반 교양 과목을 필수 과목으로 둔 것을 들 수 있다.

일제 식민지기 전문학교와 대학은 1년 단위의 학년제를 채택하여, 수업을 듣고 시험에 낙제하지 않으면 상급 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었다. 이에 비해 학점제는 재학 4년 간 졸업에 필요한 180점을 취득해야 졸업이 가능한 제도로써, 교수 학습량을 시간 단위로 측정하고, 수강 과목을 학생의 관심과 발달 정도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있었다. 학점제 시행에 따라 학년 구분도 학점의 취득 양에 따라 구분하였다. 즉, 33학점까지 취득한 자는 1학년, 34~77학점은 2학년, 78~123학점은 3학년, 124학점 이상은 4학년으로 하였다. 그러나 실제 서울대학교에서 시행된 학점제는 종전의 학년제를 바탕으로 주간 배당 시간 수만을 학점 수로 고치는 정도에 그친, 일종의 '학년 학점제'와 같은 것이었다. 1학점은 1주일에 1시간씩 한 학기 수업을 받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할 경우 취득할 수 있었는데, 체육의 경우에만 2시간씩이었고, 실험, 실습, 실기는 해당 학장이나 교무처장이 이를 정할 수 있었다. 4년 간 180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매 학기당 23학점을 이수하게 하였고, 교무처장이나 학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 17학점 미만이나 28학점 이상도 취득할 수 있었다. 단, 그럴 경우 전 학기 성적이 B 이상이어야 했다.

교과목은 필수 과목, 전공과목, 선택 과목으로 분류하였다. 전공과목과 선택 과목은 일제 식민지기에도 같은 명칭이 있었지만, 필수 과목은 해방 후 서울대학교 교육의 새로운 특징이었다. 필수 과목이란, 그 내용을 보면 실상은 뒷날의 일반 교양 과목을 지칭하는 말이었다. 이렇듯 일반 교양 과목을 필수로 하여 교양 교육을 강화하려 한 것은 일제 식민지기에는 없던 것으로, 미국 대학 교육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것이었다. 일제 식민지기에는 예과를 두어 지식인으로서 필요한 기본 지식과 교양은 예과에서 쌓도록 하고, 대학의 학부에서는 전공과목만 이수하도록 하였다. 이들 조치는 결국 대학을 수준 높은 교양 교육의 장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전문 교육의 장으로 할 것인지, 전문 교육의 장으로 하더라도 이를 통해 길러 내고자 하는 인간상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와 같

은 중대한 교육학적 문제와 관련이 있었다. 1948년 당시 학칙에 의해 규정된 필수 과목과 학점은 아래와 같았다.

- 국어 및 국문학: 8학점
- 외국어 및 외국 문학: 8학점
- 자연 과학 개론 혹은 자연 과학 계통의 학과: 4학점(문과의 경우)
- 문화사, 혹은 국어 및 국문학, 외국어 및 외국 문학을 제외한 문과 계통의 학과: 4학점(이과의 경우)
- 체육: 8학점

한편 전공은 입학 시에 주전공 혹은 부전공 학과를 정하여, 주전공 학과 과목은 최소한 60학점 이상, 부전공 학과 과목은 25학점 이상 이수하도록 했다. 선택 과목은 되도록 많이 만들어 학생들의 의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이었으나, 초창기엔 전공과목을 중시한 나머지 선택 과목으로 취득할 수 있는 학점 수가 극히 제한되었고, 선택 과목의 종류 또한 매우 적었다.

성적 평가는 ① 출석, ② 매 학기 3회 이상의 중간 시험, ③ 학기 시험, ④ 기타 교수의 숙제 등을 기준으로 하였는데, 이 중 학기 시험 성적은 전 학기 성적의 3분의 1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성적은 A, B, C, D, E, F로 표시되었고, 1947년까지는 W라는 기호도 쓰였는데, 이는 ‘취소’라고 칭했으며 F 밑에 해당하였다.

졸업을 하려면 8회 이상 등록을 하고, 재학 중 180학점 이상을 취득하되 평균 C 이상이어야 했다. 당시 구미 각 대학의 졸업 학점이 보통 120학점인 것에 비교하면, 졸업 학점 180점은 상당히 많은 편이었다. 하지만, 당시 도서관과 실험 실습실 등 공부에 필요한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렇게 정하였다.

서울대학교 최초의 졸업식은 1947년 7월 11일에 앤스테드(Harry Bidwell Ansted) 총장 주재로 거행되었다. 제1회 졸업생을 배출한 대학은 문리과대학, 공과대학, 법과대학, 상과대학, 의과대학 등 5개 대학이었고, 졸업생은 모두 215명이었다. 사범대학은 2회부터, 예술대학 미술부는 4회부터, 음악부는 5회부터, 치과대학은 6회부터 학부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석사학위는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전공과목 30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논문을 제출하여 그 심사와 구술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수여되었다. 당시 수여된 석사학위의 종류는

문학 석사, 법학 석사, 경제학 석사, 이학 석사, 공학 석사, 의학 석사의 6종류가 있었고, 1949년부터 학위가 수여되었다. 초창기에는 정규 박사학위 수여가 없었고, 이승만 대통령과 맥아더, 하지 등에게 명예 박사학위를 수여하였을 뿐이다.

## 2) 한국전쟁기 특수 교과목

1950년 6월 25일, 제1학기 등록 기간 중 한국전쟁이 발발하였고, 서울대학교의 교직원과 학생들은 전국 각지로 흩어졌다. 비록 부산, 대구, 대전, 전주, 광주 등지에 한시적으로 전시연합대학이 운영되긴 했으나, 정상적인 수업은 불가능하였다. 이에 따라 교과과정도 전시 상황에 대응하여 변통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는데, 1951년 5월 4일에 정부가 공포한 ‘대학교육에관한전시특별조치령’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수업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타 대학에 취학하여 이수한 과정도 재적 대학의 수업 과정으로 인정하였으며, 전공과목이 취학 대학에 개설되지 않은 경우 재적 대학의 허가를 얻어 유사한 다른 과목으로 대체할 수도 있었다. 또 1950학년도에 한하여 매 과목은 매주 1시간씩 12주 이상 수업 후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것을 1학점으로 인정하였고(실험, 실습, 실기는 매주 2시간씩), 학년 단일제로 편성된 대학에서는 1년간 수업 시간을 720시간까지 단축할 수 있었다. 현역 군인 및 제2 국민병 소집에 응하고 있는 학생에게는 특전을 부여하여, 위에 정한 수업 시간을 듣지 못한 경우에도 학점 인정 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주었다. 또 직무가 전공과목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그 기간에 대하여 5학점(120시간) 내의 실습 과정을 인정하였다.

그런데 이 기간의 교과 과정에서 특이한 점은 군사 훈련 교육을 실시하였다는 점이다. ‘대학교육에관한전시특별조치령’은 제14조에서 “대학은 매 학기 3학점 내지 4학점(매주 6시간 내지 8시간)의 군사 훈련을 실시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서울대학교는 1951년 11월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4시간 동안 7,000여 명의 학생을 동원하여 학과와 군사 기초 훈련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 군사 훈련은 2학점이었으며 필수 과목이었다. 단, 현역 군인과 제2 국민병 소집에 응하고 있는 학생, 기타 군사 훈련 실습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은 그 기간만큼 제외해 주었다. 1952학년도부터 훈련 내용을 강화하여 4년 간 총 280시간을 이수한 자에게 졸업을 인정하였고, 출석 지도도 일반 과목보다

엄격하게 하여 4/5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수업 태만 학생으로 간주하여 징·소집을 단행하였다.

이 군사 훈련은 1952년 5월 대통령령에 의해 정식으로 법제화되었다. 그러자 서울대학교는 학생처장과 각 단과대학 학장들로 구성된 학도군사훈련위원회를 구성하였고, 1952년 2학기부터는 각 단과대학별로 파견된 교관과 상의하여 분단별(分團別) 훈련을 실시하였다. 학점은 재학 중 8학점을 반드시 취득하도록 하였으나, 이 8학점은 졸업 사정 기준인 180학점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군사 훈련 수업은 휴전 협정이 조인되고 1년 정도 지난, 1954년 7월 12일에야 해제되었다.

군사 훈련과 함께 공과대학에서 공장 실습을 한 것도 이 시기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한국전쟁 중임에도 정부는 유엔군민간원호처와 유엔한국재건위원단의 원조를 바탕으로 1951년~1952년 경제 부흥을 위한 재건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결국 실행되지 못했지만 2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 재건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공 계통 학생들의 사회적 수요가 급증하게 되었다. 이에 공과대학은 “현장 강의로써 이론과 기술을 체득하도록 하고, 근로역행(勤勞力行)의 정신을 함양하며, 기술자로서 기본적 자질을 구비하게 한다”는 목적 하에, 1952년 1학기부터 3·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 학기 5주간씩 필수로 공장 실습을 실시하였다. 실습 공장은 학교에서 지정하였는데, 1952년도의 경우엔 대한조선공사 등 전국 각지에 산재한 39개의 공장을 지정하였다.

그런데 전쟁 기간 동안 학생들의 출석과 결석이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다. 당시 대학생들에게 징·소집 연기라는 특전을 준 것은 오로지 학업을 계속하여 전쟁으로 인한 국민 문화 수준의 저하를 가급적 방지하는 데 있었다. 만약 본연의 임무인 학업을 게을리 하는 학생이 있다면, 그것은 그의 개인적 잘못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학교 당국보다는 오히려 정부나 사회 일반에서 이 문제에 큰 관심을 보였다.

1952년 7월에 문교부와 국방 당국은 매 학기 수강 시간 수 혹은 수업 일수의 2/3 이상 출석하지 않은 자, 군사 훈련 시간에 4/5 이상 출석하지 않은 자, 매 학기 15학점 이상 수강하지 않은 자 등을 모두 징·소집하기로 결정하였다. 서울대학교도 출석이 수강 시간 수의 2/3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 학과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주지 않기로 하였다. 또 교수의 강의를 법정 시간 수에 미달할 때에는 보강을 원칙으로 하되, 그래도 시간 수가 부족하면 해당 학과의 학기말 고사를 시행할 수 없게 하였다. 그 외에도 교원 및 학생들의 수업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출강표를 비치하기도 하였고, 학생 수가 100명 미만

을 경우 점호를 철저히 행하고, 100명 이상일 경우엔 명례표(名列表)를 돌려 서명하게 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학생들의 출석률은 지극히 저조하였다. 1954년에는 문리과대학의 경우 3분의 1만 출석해도 학점을 인정해 줄 정도였다. 이처럼 학생들의 출석률이 낮았던 것은 전란 중 혹은 그 직후, 생활이 매우 어려워 많은 학생들이 부업으로 일자리를 가져야 했기 때문이었다.

1954년에는 전쟁 후 부족한 각급 학교 교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교직과(敎職科)를 설치하였다. 문교부는 1954년 11월에 ‘교육공무원자격검정령’ 시행 세칙을 발표하여 일반 대학에 교직과를 설치하는 것을 제도화하였다. 교직과 이수자로서 평균 성적이 B 이상인 자는 교무 자격 무시험 검정을 거쳐 중등학교 2급 정교사의 자격을 받을 수 있었다. 서울대학교에서는 문리과대학, 미술대학, 음악대학에 교직과를 설치하여 교원을 양성하였다.

### 3) 교육법시행령 제정과 교과 분류

전시연합대학이 1952년 5월 31일자로 해체되자 이에 속해 있던 서울대학교 학생들도 다시 서울대학교라는 울타리 내에서 교육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전란의 소용돌이를 막 겪고 난 뒤라 미처 교과 과정을 정비할 틈이 없었다. 따라서 교과 과정은 초창기에 쓰이던 규정에다 ‘대학교육에관한전시특별조치령’ 등의 조문을 일부 가미하여 구성하였다.

이후 학교가 안정되어 감에 따라 교과 과정을 정비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1952년 4월에 공포된 ‘교육법시행령’도 여기에 큰 영향을 주었는데, 교육법시행령의 제125조는 교과 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 대학(사범대학 포함)의 교과는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하고, 필수 과목은 일반 교양 과목과 전공과목으로 구분한다.
- 일반 교양 과목이라 함은 일반 지도적(一般 指導的) 인격을 도야함에 필요한 과목을 말하며, 전공과목이라 함은 해당 학과의 전문 학술 연구상 필수(必修)하여야 할 과목을 말한다.

- 일반 교양 과목은 아래 각 계열에 걸쳐 3과목 이상씩을 이수하여야 한다.
- 인문 과학계: 철학, 윤리학, 문학, 역사학, 심리학, 논리학, 사회학, 종교학, 교육학, 인문 지리학, 인류학, 외국어.
- 사회 과학계: 헌법, 법학, 정치학, 경제학, 심리학, 인류학, 교육학, 역사학, 사회학, 통계학, 가정학.
- 자연 과학계: 수학, 통계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지질학, 천문학, 인류학, 가정학.
- 선택 과목은 전 교과 과정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 일반 교양 과목은 필수 과목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1949년에 제정된 교육법은 교과 구성을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만 분류하였는데, 교육법시행령은 이를 더욱 세분화하여, 필수 과목을 다시 일반 교양 과목과 전공과목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일반 교양 과목의 종류와 비율, 선택 과목의 비율 등 구체적인 항목까지도 규정하였다. 일반 교양 과목을 인문 과학계, 사회 과학계, 자연 과학계 등 세 계열로 나누는 방식은 1990년 서울대학교가 영역별 분류를 시행할 때까지 기본 분류 방식으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이 교육법시행령은 사범대학의 경우 교직 과목이 비중이 커야 함에도 이에 대한 규정이 없고, 각각의 계열에서 3과목 이상씩을 이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서울대학교는 1952년 9월 20일에 교무과장회의를 열어 교과목 편성과 학점 배당 문제를 논의하였다. 그 결과,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결정하였다.

- 교과목은 필수 과목 120학점과 선택 과목 60학점 이내로 하고, 필수 과목 중 일반 교양 과목은 30~40학점, 전공과목은 80점 이상으로 한다(주전공 55학점 이상, 부전공 25학점 이상).
- 일반 교양 과목 중 국어·외국어·체육을 필수로 하고, 군사 훈련은 특별 필수 과목으로 하여 일반교양 과목에 포함하되 그 학점은 졸업 이수 학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 사범대학에서는 교육 목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육 원리 교육사 교육 사회학 등의 교직 과목을 두기로 한다.

보다 본격적인 교과 과정 정비 작업이 추진된 것은 1953년 말, 교무처장을 비롯한 10명으로 교과과정위원회를 구성하면서부터였다. 이 위원회는 종래의 교과 과정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교육 방향에 부합되는, 새로운 교과 과정을 마련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1954년 2월, 여기서 결정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은 그 후 서울대학교 교과 과정의 기본 골격을 이루었다.

- 교양 과목을 종래의 40학점에서 46학점으로 하고, 필수 과목으로 국어 8학점, 영어 8학점, 제2 외국어 4학점, 체육 2학점, 철학 4학점, 문화사 4학점, 자연 과학 개론 4학점, 선택 과목으로 인문 과학계, 사회 과학계, 자연 과학계에서 각각 4학점씩 이수하도록 한다.
- 부전공을 할 때에는 주전공을 60학점 이상, 부전공을 30학점 이상으로 한다.
- 학점 규정은 매주 1시간씩 15주 강의와 시험을 1학점으로 하되, 실험·실습·실기는 매주 2시간씩 15주 이상 이수하는 것을 1학점으로 한다.
- 교양 과목은 1학년에 한정하지 않고, 1·2학년에 걸쳐 부과한다.

한편, 1954년 11월 문교부 주최로 열린 대학교육심의회위원회는 졸업 학점을 180점에서 160학점으로 낮출 것을 결의하였다. 도서관이 확충되고 국내 출판과 외국서적 도입이 점차 활발해지는 등 교육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서울대학교도 1955년 3월에 열린 학장회가 이를 반영하기로 결정하여, 1956년 졸업생부터 매년 졸업 학점을 5학점씩 줄여서, 1959년 졸업생부터는 160학점 이상만 취득하면 졸업할 수 있었다.

1955년의 학칙 개정 때는, 이상의 사항을 모두 반영하여 교과 과정 전반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였다. 졸업 학점이 줄어들에 따라 1학기에 최대 취득 가능한 학점 수가 28학점에서 24학점으로 줄었고,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의 학점 수도 각각 116학점 이상과 44학점 이하로 바뀌었다. 필수 과목 중 전공과목은 80학점 이상, 일반 교양 과목은 36학점 이상 취득하도록 규정하였다. 사범대학에서는 교양 과목의 선택을 교직 과목으로 대체하였다. 이때 대학원 교과 과정도 개편되어, 석사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30학점에서 24학점으로, 박사학위과정 수료는 80학점에서 60학점으로(석사과정 수료 학점 포함) 줄었다.

1955년도에는 석사학위와 박사학위 및 명예 박사학위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대학원 학위 수여 규정이 마련되었다. 당시 서울대학교에서 수여하는 석사학위는 공학·농학·문학·이학·정치학·미술·법학·상학·경영학·수의학·약학·음악·의학·치의학 석사 등 총 14종이었고, 박사학위는 공학·농학·문학·철학·이학 법학·경제학·수의학·약학 의학·박사 등 총 10종이었다.

한편 의과대학과 치과대학에서는 전문 의사 제도가 채택됨에 따라 1958년부터 인턴·레지던트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제도에 의하면 이들 대학 졸업생들은 부속 병원을 비롯한 종합 병원에서 1년 간의 인턴 과정과 4년 간의 레지던트 과정을 마쳐야 전문 의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다.

## 제 2 절 교과 과정 개편 노력과 교양과정부 설치(1961~1974년)

### 1) 학사 자격 고시제와 학위 등록제

‘5·16 쿠데타’로 등장한 박정희 군사 정권은 실력 없는 학사 배출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소위 ‘학사 자격 고시제’란 것을 실시하였다. 1961년 9월에 발표된 ‘교육에 관한 임시특례법’은 “학사학위는 4년제 대학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학사 자격고시에 합격한 자에게 수여할 것”을 명기하였다. 이는 종전에 각 대학 장의 책임 하에 수여하던 학사학위 수여를 국가의 강력한 통제 하에 두려는 의도였다.

1961년 10월에는 ‘학사자격고시령’이 공포되어 학사자격고시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였다. 이에 의하면 시험 과목은 교양 과목과 전공과목이 있었는데, 교양 과목은 교육 법시행령 125조에서 규정한 일반 교양 과목을 지칭하였다. 시험 양식은 객관식이었으며, 12월 중에 실시하였다. 시험 시간은 교양 과목 120분, 전공과목 180분이었다. 실시 첫해 서울대학교는 97.5%의 합격률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학사자격고시는 대학입학자격 국가고시와 마찬가지로 시행 초부터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그 비판의 내용인즉, “교육의 향상은 교수, 교육 과정, 시설, 학사 행정 등을 개선함으로써 가능한 것으로, 고시 제도는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 온다”, “획일적인 고시는 자율성, 비판성, 창의성, 다양성이라는 대학 교육의 본질에 위배된다”, “객관식 문제가 학구 능력을 마비시킨다”, “준비 기간 부족 등으로 문제의 질이 너무 조잡하고 획일적이다” 등이었다.

그러자 문교부는 1962년부터 학사자격고시를 부분적으로 개선하고자 교양 과목만(국어·영어·문화사·자연 과학 개론) 국가가 관리하여 객관식으로 출제하고, 전공과목은 각 대학이 주관식과 객관식을 함께 출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각 대학의 전공과



목 시험 문제는 지구위원회(地區委員會)에 제출하여 사전 검토를 받도록 하고, 합격 여부는 문교부가 각 대학에서 시험 결과를 받아 교양 과목 성적과 합산하여 결정하였다. 이해 서울대학교는 학사 자격 고시 반대 운동에 참여하지 않고 정부 시책에 호응하여 거의 전원이 응시하였는데, 응시자 중 98.3%가 합격하였다.

그러나 2회에 걸친 학사자격고시에서 약간 명이 탈락하였을 뿐, 실질적인 효용이 없자 1963년 4월 학사자격고시는 결국 폐지되고 말았다. 그리고 서울대학교는 1963년 졸업생부터 다시 서울대학교 자체의 기준에 따라 졸업 사정을 하게 되었다.

1965년부터는 학위 등록제가 시작되었다. 그해 12월 교육법시행령이 개정되어 학사와 석사는 문교부에 등록해야 했고, 문교부 장관은 그 사실을 증명하는 등록증을 교부하게 되었다. 박사학위 수여 요건도 변경되어, 1965년 3월부터는 학위논문 제출 후에 치르던 어학 시험을 논문 제출 전에 치르도록 했다.

1971년에는 문교부가 다음과 같이 박사학위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첫째, 구제(舊制) 학위를 1975년 2월까지만 존속하게 하고 이후에는 폐지한다. 둘째, 박사학위 수여에 대한 문교부 장관 승인제는 사후 보고제로 바꾼다. 이는 종래의 승인제가 자율성 침해라는 인상만 줄 뿐 실효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한편 학위의 종류는 계속 증가하였다. 학사학위는 1962년 경영학과 신설로 경영학 학사학위가 첨가되어 19종이 되었고, 석사학위는 1963년에 가정학 및 체육학, 1966년 경영학, 1968년에 간호학 석사가 늘었다. 또 전문 대학원의 교육학, 도시 계획학 및 조경학 석사도 신설되었다. 박사학위는 1972년 정치학 박사가 신설되어 11종이 되었다.

## 2) 교과과정연구위원회 활동과 교과 과정 개편

서울대학교는 1955년 학칙 개정을 통해 교과 과정을 전면 개편한 뒤, 1960년대에도 교과 과정 개편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다. 이를 잘 보여 주는 것은 이 시기에 구성된 교과과정개편위원회와 교과과정연구위원회, 그리고 영역별교수단 등의 활동이다.

먼저 교과과정개편위원회는 1962년 7월에 구성되었다. 이 위원회는 본부 교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교과과정개편전체위원회, 각 단과대학에서 학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교과과정개편위원회, 각 학과에 주임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교과과정개편소위원회를 두었다. 이해 12월에 교과과정개편전체위원회는 전 단과대학의 시안을 검토·완료하여

개편 작업을 마무리하고, 뒤이어 학칙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학칙에 위원회가 제시한 모든 원칙이 반영되지는 못하였고 그 일부가 채택되었다. 일반 교양 과목의 이수 학점이 40학점에서 42학점으로 늘어났고, 전공과목 학점도 80학점에서 84학점으로 늘었다.

1963년부터는 학칙 개정에 따른 새로운 교과 과정에 의한 수업이 실시되었으나, 여전히 미진한 점이 많았다. 이에 개교 이래 가장 전문적인 교과 과정 연구 기구라 할 수 있는 교과과정연구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 위원회는 교과 과정 개편 연구를 위한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제1차 연도인 1964년에 교과 과정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7월에 연구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보고서는 교과 과정 전반, 교양 과정, 전공 과정에 대해 총 23개 항목의 시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았다.

### 1. 교과 과정 전반

- ① 총 이수 학점으로 160학점은 대체로 적절하나, 앞으로 140학점 정도로 감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② 교양 과정과 전공 과정의 비율은 현상 유지가 좋겠으나, 융통성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 ③ 전반적으로 필수 과목을 줄이고, 선택 과목을 늘려야 한다.
- ④ 과목의 학점 단위는 3학점을 원칙으로 하되, 특수한 경우는 2학점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
- ⑤ 과목의 학점 단위 재조정과 함께 모든 과목을 검토하여 과목명, 내용 등을 재조정할 것을 제안한다.
- ⑥ 평가 방법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 ⑦ 학점 기호 중 E는 학점이 아니고 보류이므로, I 또는 다른 기호로 표시해야 한다. 그래서 사정에 의해 시험을 보지 못했거나, 숙제를 미처 제출하지 못한 학생들의 성적 평가를 보류한다는 부호로만 사용해야 한다.
- ⑧ 전과·전학의 문호를 개방하여 최소한 과 정원의 20%는 전·출입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 ⑨ 전 교수는 강의 초나 그 이전에 담당 과목의 내용·범위 및 참고 서적을 소개하는 교수 개요를 배부함으로써, 학생들이 미리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 2. 교양 과정

- ① 교양 과정은 서울대학교 전체를 통하여 유별(類別)만 정하고, 구체적인 과목은 각 단과대학에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 ② 교양 과정 중 필수 과목은 약 2/3로 하고, 나머지 1/3은 전공과 관계있는 과목으로 충당할 것을 제안한다.

- ③ 교양 과정은 근본적이고 대담한 개혁이 필요하므로, 이의 개선을 담당할 전문적인 연구 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 ④ 각 과목이 포함하는 내용과 수준에 따라 작성된 시험 문제를 학생들에게 실시하여,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그 과목을 수강하지 않고 학점을 취득하게 하든가, 타 과목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를 제안한다.
- ⑤ 교양 과정에 예능 과목을 한 과목 설치하는 것이 학생들의 다양한 교양을 위해 도움이 될 것이다.
- ⑥ 체육은 1·2학년에게만 필수로 하고, 3·4학년에게는 선택 과목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3. 전공 과정

- ① 교수들은 학생들을 보다 잘 지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필요가 있다.
- ② 전공 총 이수 학점은 80~90학점으로 정하는 것이 좋으며, 그 중 필수 과목은 의약계를 제외한 모든 대학에서 40~60학점 사이에서 정할 것을 제안한다. 선택 필수 과목은 두어도 좋지만 20학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③ 전공과목은 강의의 수준을 약간 높여 학생들의 실력에 도전될 수 있도록 배려함이 필요하다.
- ④ 교수 방법은 질의·토의·실험·실습·조사 활동·연습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⑤ 강의와 관련한 숙제의 횟수와 양을 다소 늘리는 편이 좋다.
- ⑥ 부전공을 하는 학생은 현재처럼 주전공 60학점, 부전공 30학점을 취득하게 하는 것이 좋다.
- ⑦ 전공의 기초 과목과 교직 과목에 직접 관계를 갖고 있는 학과의 교수 정원을 늘리고, 강사에 의한 교육을 지양한다.
- ⑧ 현재 ROTC 학생들이 군사학 수강으로 체육 학점을 대체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한다. 군사학은 160학점 외로 인정해야 한다.

교과과정연구위원회는 제2차 연도인 1965년 상반기에는 교양 과정 개선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였고, 하반기에는 인문 과학·사회 과학·자연 과학·외국어의 4개 분과 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위원회별로 해당 분야의 목표, 내용, 지도 방법을 연구하여 교수 개요를 작성하였다. 그 외 교양 과정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시설, 교재, 평가 방법, 행정 조직 등에 관해서도 많은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교과과정연구위원회는 제3차 연도인 1966년에 이르러 연구비가 확보되지 못하여 결국 해체되고 말았다. 그렇지만 이후 이루어지는 교과 과정 개편 작업은 이 위원

회의 연구 결과에 힘입은 바가 매우 컸다.

1967년에는 각 단과대학 또는 학과 별로 기존 교과 과정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한 후에,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새로운 교과 과정을 작성하였다. 그 결과 나온 것이 '서울대학교 교과 과정 1968-1969' 이었다. 여기에는 각 단과대학 및 학과별 교과 과정은 물론, 대학원과 전문 대학원의 교과목도 상세하게 수록되었다. 개편된 교과 과정은 이듬해인 1968년 1학기부터 시행되었는데, 단과대학별 변경 사항은 아래와 같았다.

1. 문리과대학은 전공 필수학점 수를 대폭 줄여 30~60학점으로 고정하였다.
2. 상과대학은 종래 모든 과목이 '4학점 4시간' 이던 것을 '3학점 3시간' 으로 변경하였고, 교재는 원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영어 강독 시간은 없었다.
3. 미술대학은 교양 과목을 대폭 증설하고, 종전에 다른 학과의 실기 과목 선택을 금하던 것을 폐지하였다.
4. 약학대학은 학점과 강의 시간 수를 일치하게 하였다.

1969년부터는 교양 과정의 이수 연한이 2년으로 연장되었는데, 이에 따른 교과 과정 개편을 위해 영역별교수단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는 각 단과대학별로, 특히 학과 중심으로 운영되던 교과 과정을 재조정하고, 교육 기능의 통합 및 대학 간의 교류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1969년 9월 교과 과정 개편을 위한 「연구 자료 I」로 발간하였다. 이 연구 자료에서는 각 부문별 운영위원회의 설치, 과목 선택의 지도 및 승인은 자문 교수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할 것, 대학원 교과과정위원회의 설치 등을 제안하였다. 그 가운데 부문별 운영위원회의 설치 제안은 일부 채택되어 12월에 의약계 운영위원회의가 설치되었다.

1971년 10월에는 학칙이 크게 개정되었다. 이 학칙 개정에 의하여 매 학기 최고 22학점, 최저 16학점을 취득하여야 했다. 1973년 3월에 다시 학칙이 개정되어, 각 대학 및 학과의 교과 과정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장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하도록 규정하였다.

### 3) 교양과정부 설치와 운영

미군정기 교양 과목 교육은 문리과대학이 담당하였다. 그러다 정부 수립 후에는 각

단과대학에서 교양 교육을 담당하였는데, 이는 예산의 낭비와 교육적 효과의 저하를 초래하였다. 그리하여 서울대학교는 한국전쟁 중 환도 후부터 교양과정부의 설치를 계획하였지만 시설 및 예산의 부족으로 1956년이 돼서야 문리과대학 안에 교양과를 설치할 수 있었다.

1956년 1학기부터 법과대학, 수의과대학, 음악대학, 미술대학, 문리과대학의 5개 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교양과를 설치하고,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일간 공동으로 교양 과목 교육을 실시하였다. 개설 과목은 국어(2학점), 영어(4학점), 제2 외국어(2학점), 철학 개론(2학점), 문화사(2학점), 자연 과학 개론(2학점), 체육(1학점) 등 총 7개 과목 15학점이었다. 그러나 사범대학, 공과대학, 농과대학은 여전히 자체 내에서 교양 과목 교육을 실시하였다.

1957년 5월 16일에는 학장회에서 ‘교양과정부 규정’이 통과됨에 따라, 교양과는 교양과정부로 승격되었고, 강의를 담당할 19명의 전임 교원도 임명되었다. 그리하여 교양과정부에 속한 5개 대학 신입생들은 교양과정부에서 필수 교양 과목을 이수하고, 선택 교양 과목은 교양과정부와 소속 대학에서 이수하게 되었다.

그러나 교양과정부의 교수진 확보와 법제화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1958년 3월에 학장회는 ‘교양과정부 설치안’을 심의·채택하고 문교부에 이를 건의하였다. 이 안은 “조속한 시일 내에 교양과정부를 법규화시킴으로써 인적·물적 애로를 타개할 것”을 추구하고, 교양과정부의 연한은 의학계 2년, 인문·사회계 및 이학계는 1년으로 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 필수 교양 과목 15학점과 선택 교양 과목 6학점 합계 21학점 이상을 교양과정부에서 이수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시설 및 예산 부족으로 교양과정부 존재 자체가 문제되었고, 결국 1959년 교양과정부는 해체되고 말았다. 그리고 교양 과목 교육은 이전처럼 다시 각 단과대학에서 담당할 수밖에 없었다.

교양과정부가 다시 설치된 것은 1968년이였다. 1967년 5월에 학장회는 “교양 과목의 교육을 각 단과대학에서 분산하여 실시함으로써 인적·물적 낭비를 초래함은 물론 교양 교육의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교양과정부 설치를 통해 교양 과목을 집중 교육함으로써 학생의 인격 향상에 기여하기로 결의하였다. 12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안건이 통과됨으로써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그 이듬해에 공과대학 구내에 공식적으로 교양과정부가 설치되었다. 그런데 이는 앞서 살펴본 1960년대 이루어진 일련의 교과 과정 개편 노력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일반 교양 과목의 학점 수는 1960년 36학점 이상에서, 1962년에는 40학점 이상, 1967년 42학점 이상, 1971년에는

48학점 이상으로 점점 늘어나 교양 교육 강화 추세를 반영하고 있었다.

일반 교양 교육 과목은 1950년대와 마찬가지로 국어, 영어, 제2 외국어, 철학 개론, 문화사, 자연 과학 개론, 체육이 필수였다. 그러다 1969년부터는 남학생에 한하여 교련이, 1970년부터는 국민 윤리가 필수 과목으로 첨가되었다.

이때의 교양과정부는 1학년 학생의 교양 과정 교육과 의예과 및 치의예과의 교육 과정 및 학적을 관장하였다. 원칙적으로는 신입생 전원과 의예과·치의예과의 학생들은 당연히 교양과정부에 소속되어 교육을 받아야 했으나, 수용 능력의 한계 때문에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설치 첫해인 1968년에는 공과대학, 문리과대학, 법과대학, 상과대학의 신입생 1,410명만이 수용되었다. 다음해 전용 건물이 확보되면서 상황이 많이 호전되었는데, 이해에는 교양과정부 이수 연한이 2년으로 연장되었다. 1970년에는 미술대학, 음악대학, 의예과, 치의예과, 사범대학의 체육교육과 학생을 제외한 신입생 전원이 수용되었고, 그 수는 2,600명에 달하여 최다 인원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서울대학교 종합화 계획이 구체화되고 그 과도기적 조치로 미술대학이 교양과정부 건물 일부로 이전하게 되자, 1972년부터는 수용 인원이 급격히 줄었다. 이에 교양과정부 학생 전체를 수용하려던 당초 계획은 중단되어 공과대학, 문리과대학, 사범대학 이외 대학의 신입생들은 각 소속 대학에서 교양 과정을 이수하였다. 그리고 계열별 모집이 실시된 1974년에는 인문 계열, 사회 과학 계열, 자연 과학 계열 및 교육 계열 학생들이 교양과정부에서 교육을 받았다. 1975년의 종합화 계획 실시로 교육 기구가 개편되었고,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등의 기본 학문 대학이 서울대학교 전체 학생의 기초 교육 강좌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에 교양과정부는 다시 한번 폐지되는 운명을 맞았다.

### 제3절 실험 대학 참여와 법정 교양 필수 과목 운영(1974~1980년)

#### 1) 실험 대학 참여와 교과 과정 조정

##### (1) 기초 과정의 교과 과정 개편

서울대학교는 종합화와 실험 대학 참여를 계기로, 1974년에 기초 과정 및 전공 과정

의 교육 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편하였다. 종합화 이전에는 각 단과대학별로 교과 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였기 때문에 중복된 교과목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고, 각 학과 간의 횡적인 연계도 약했다. 따라서 종합화와 함께 통합된 교과 과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었다. 또 실험 대학 참여로 계열별 모집을 실시하여 일정 기간의 기초 과정 이수 후 전공을 선택하게 됨에 따라, 기초 과정 및 전공 과정의 교육 전반에 대해 새로운 틀을 짜는 것이 필요하였다. 실험 대학은 졸업 학점 감축과 부전공제 실시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었기에 이러한 내용도 새로운 교과 과정에 반영해야 했다. 특히 이전까지 기초 교육을 담당하던 교양과정부가 1975년에 해체되므로 이를 대체할 기초 과정 교육에 대한 계획 수립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기초 교과 과정은 세 단계를 거쳐 확정되었다. 먼저 교육연구 및 기구조직계획(Academic Plan)에서 ‘교과 과정의 일반 원칙과 편성 방침’을 마련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교양과정부의 교양교육연구위원회와 사범대학의 교육과정연구위원회가 교과 과정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1973년 10월에 기초과정연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기초과정연구위원회가 작성한 시안을 11월 20일에 기초과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하였다. 이때 확정된 기초 교과 과정 편성상의 주요 원칙은 다음과 같았다.

1. 계열별 신입생 모집과 기초 과정 이수 후 전공 학과를 선택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2. 학사과정 이수에 요구되는 총학점을 140학점 이상으로 하되, 교련(6학점)은 이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3. 각 대학 교직 과정 선택자의 교직 과목은 140학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4. 기초 과정에서 이수할 학점 수는 인문·사회 계열(2년 과정) 76학점, 자연계열(1년 과정) 39학점으로 한다.
5. 각 교과목의 이수 학점 수는 학기당 3학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어는 문장 이해 2학점·작문 1학점 계 3학점, 실험 1학점, 체육 1학점으로 한다.
6. 학기당 취득할 수 있는 학점 수는 최고 19학점으로 한다.
7. 전공 진입에 필요하다면 인문·사회 계열 기초 과정은 2학년 2학기에 9학점(3과목) 이내의 전공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8. 위 7항에 대한 구체적인 교과목은 전공 학과의 전공 교과목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때 전공 학과의 요구에 따라 편성된다.
9. 특수 계열(농학·교육·가정, 각 예과·간호학과·음대·미대)의 기초 과정은 따로 정하되 그 기본은 이 안에 따른다.

〈표 3-3-1〉 기초 과정 학점 배분표(1974학년도 기준)

구분 교과목	1학년		2학년		학점계	
	학점 수		학점 수		인문·사회계	자연계
	인문·사회계	자연계	인문·사회계	자연계		
국어	3	3	-	-	3	3
외국어	9	6	-	-	9	6
철학	3	3	-	-	3	3
문화사	3	3	-	-	3	3
수학	-	6	-	-	-	6
사회 과학	6	-	-	6	6	6
자연 과학	6	16	-	-	6	16
국민 윤리	3	-	-	3	3	3
체육	2	2	2	2	4	4
계열 선택 과목	3	-	27	-	30	-
전공과목	-	-	9	-	9	-
전공 선택 과목	-	-	-	26	-	26
계	38	39	38	37	76	76

이 안의 핵심은 졸업 학점을 140학점으로 낮추고, 기초 과정 이수 학점을 인문·사회계 76학점, 자연계 39학점으로 정한 것이었다. 이에 바탕을 두고 기초 과정 신입생들의 학점 취득을 위한 일반적인 학점 배분 구조와 설정 과목을 〈표 3-3-1〉과 같이 편성하였다.

이 학점 배분 구조의 특징은 철학, 문화사, 자연 과학 등의 체제로 교과목을 분류했다는 점, 선택 과목의 여지가 매우 크다는 점 등이 교양과정부의 학점 배분 방식과 거의 일치하였다. 즉, 1974년 교양 교육 구조 개편 작업은 실험 대학 시행으로 졸업 학점이 줄어든 것을 제외하면, 교육적 지향점은 교양과정부의 그것을 계승하였음을 말해 준다.

이 안은 1974~1975년까지 2년 간 시행하였는데, 1976년에 이를 다시 변경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였다. 인문·사회계 신입생들의 기초 과정 교육 기간이 애초의 2년에서 1년으로 줄고, 법정 교양 필수 과목으로 기존의 교련에다 국민 윤리·한국사·체육 등이 새로 참가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975년 10월, 교과과정위원회는 1976년부터 새로 시행할 기초 과정 교과 과정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였다.

1. 필수 과목: 국어(2), 작문(1), 국민 윤리(2), 한국사(2), 체육(4), 교련(6) 등 6과목.



2. 교과 계열별 교과목.

- 외국어: 영어 I · II, 독어 I · II · III, 불어 I · II · III, 중국어 I · II · III.
- 인문 과학: 철학계(철학 개론, 일반 논리학, 종교학 개론, 미학 개론), 사학계(동양 문화사, 서양 문화사, 사학 개론, 고고학 개론), 어문학계(한문, 문학 개론, 언어학 개론)
- 사회 과학: 정치학 개론, 사회학 개론, 법학 개론, 심리학 개론, 인류학 개론, 경제 원론, 지리학 개론, 교육학 개론.
- 자연 과학: 1974~1975학년도와 같음.

3. 학과군별 학문 계열별 기초 과정 최저 이수 학점.

학문 계열/ 학과군	인문·사회· 교육(인문· 사회)계	자연(이공,생약) ·교육(자연) ·농학계	가정, 농가정· 간호계	미술·음악· 체육계	의예· 치의예과
외국어①	9	6	6	9	9
인문 과학	] 12②	3		6	3
사회 과학		3	9③	6	3
자연 과학	3	22④	15⑤	3	30⑥
필수 과목	18	18	12⑦	18	16⑧
학점계	42	52	42	42	61

- ① 외국어 9학점인 경우 영어 3학점 이상 이수.
- ② 인문계는 인문 과학 9, 사회 과학 3학점, 사회계는 인문 과학 3, 사회 과학 9학점, 교육계는 인문 과학 3, 사회 과학 3학점 포함하여 12학점 이수.
- ③ 인문 과학 3, 사회 과학 3학점 포함 9학점 이수.
- ④ 전 계열 학과 수학 I · II 공통(6학점), 자연(이공)계는 통년 완성 또는 학기 완성 교과목 중 2~3종을 택하여 16학점, 농학계 및 자연(생약)계는 지구과학 및 실험을 제외한 통년 완성 또는 학기 완성 교과목 중 2~3종을 택하여 16학점, 교육(자연)계는 물리학 및 실험(I · II), 화학 및 실험(I · II) 16학점을 이수.
- ⑤ 수학(3학점), 물리학 및 실험(4), 화학 및 실험(4), 생물학 및 실험(4)을 이수.
- ⑥ 수학 I · II, 물리학 및 실험(I · II), 화학 및 실험(I · II), 생물학 및 실험(I · II)을 이수.
- ⑦ 필수 과목 중 교련 6학점 제외.
- ⑧ 교련 6학점 중 2학점은 본과에서 이수.

이 학점 배분 구조표에서 눈에 띄는 것은 먼저 외국어와 필수 과목을 제외한 교양 과

목의 영역 분류를 인문 과학, 사회 과학, 자연 과학 등으로 단순화하였다는 점이다. 이것은 교양과정부가 1975년 3월 정식으로 해체되고 기초 과정 교육이 기본 학문 대학(인문·사회·자연)으로 이관된 사실과 상응한다. 또 기초 과정에서 이수해야 할 학점 수는 줄었지만 교양 필수 과목의 학점 수는 오히려 전체 교양 학점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늘어난 점이다. 이는 1974년~1975학년도에 총 이수 학점 140학점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교련 6학점을 문교부 요구에 의해 140학점 이내에 포함시켰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학생들의 과목 선택 폭은 훨씬 좁아질 수밖에 없었다.

## (2) 전공 과정의 교과 과정 개편

전공 과정 교과 과정은 1974년에서 1975년에 걸쳐 재편성되었고, 1976년부터 시행되었다. 그 과정을 보면, 먼저 인문·사회·자연 세 기본 학문 계열 학과의 전공 과정 교과목을 연구하기 위하여 1974년 10월에 '전공과정교과과정연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 연구위원회는 각 학과의 협조 아래 교과 과정 시안을 만들었고, 그해 11월 말에는 인문 계열 12개 학과와 사회 과학 계열 7개 학과의 교과 과정을 완성하였다. 이어 12월 중에 세 기본 대학 이외의 전문 대학의 교과 과정을 작성 제출하도록 하고, 각 단과대학에 교과과정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기본 학문 대학 각 학과의 교과 과정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976년부터 부전공 제도를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또 다시 교과 과정을 개편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를 위해 1975년 10월 '교과과정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교과목을 각 영역과 학과별로 전체적으로 조정하고, 졸업 학점 감축과 부전공 제도 도입 등의 상황에 맞추어 전공 교과 과정을 개편하기 위해서였다. 이때 교과 과정 편성 원칙의 일반 방침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하였다.

1. 교과목 담당 교수의 편이나 학사 행정의 편의만을 위주로 하지 않고 폭넓은 교과목 이수가 가능하도록 한다.
2. 교과목 설정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저 4년 이상 활용 가능하도록 한다.
3. 교과목의 지나친 세분화 경향을 막고 유사 과목의 합리적 통합을 시도한다.
4. 160학점에서 140학점으로 학점이 감축됨에 대응하여 학점당 교과 내용을 충실히 한다.
5. 교과목은 원칙적으로 그 귀속되는 학과에서 제공한다.
6. 학사과정 교과 과정의 연결 과정으로서 대학원의 교과 과정도 연계하여 편성한다.

이상과 같은 방침 아래 각 학과에서 교과목을 제출받은 후, 교과과정연구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하여 교과 과정을 확정, 1976년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이 때 실시된 전공 과정 교과 과정의 과목 영역별 최저 이수 학점은 <표 3-3-2>와 같다.

1976년의 교과 과정 개편으로 교직 과정의 내용도 달라졌다. 교직 과정은 8개 대학 41개 학과(870명)에 설치되었고, 공과대학 및 농과대학의 지정 학과에서는 교직 과정을 이수하지 않고도 준교사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었다. 교직 과정은 책정된 정원 내에서 2학년 2학기 등록 시에 교직 과정에 등록하여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도록 규정하였다.

교직 과정의 교과는 교직 과목 14개 학점과 각과 지도법 2학점으로 구성되었다. 교직 과목은 다시 필수 4과목(교육학 개론, 교육 심리학, 학교와 지역 사회, 교육 실습 각 3학점)과 선택 6과목(교육 철학, 교육사, 교육 과정, 생활 지도, 교육 평가, 학교 행정 각 2학점)으로 나누고 이 중 교육 실습을 제외한 전 과목을 사범대학 교육학과에서 관장하도록 하였다.

한편, 실험 대학 사업은 졸업 학점 감축과 더불어 부전공제 실시를 주요 사업 내용으로 하였다. 부전공제가 실험 대학 사업의 주요 내용이 된 이유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였다. 첫째, 인접 학문 간 공동 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학문 풍토에 부응하여 학생들에게 종합적인 학문과 지식의 습취를 가능하게 한다. 둘째, 또 하나의 전공을 이수함으로써 취업의 기회를 확대한다(졸업장에 이를 명시). 셋째, 계열별 입학생의 학과 배정 과정에서 나타날 학생들의 불만을 해소한다.

부전공제는 1976학년도부터 시행하기로 한 교과 과정 개편에 반영되었다. 이를 위해 각 학과에 부전공제 실시에 관한 의견 조사서를 배부하고, 각 학과 교수회의를 통해 의견을 모은 후, 교과과정위원회와 교과과정연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서 부전공제 실시

<표 3-3-2> 과목 영역별 최저 이수 학점

구분	계열	인문·사회계	자연계	교육계
교양		42	42	42
전공 a.	주전공만 할 경우 주전공	63(30)	63(30)	63(30)
	b. 부전공을 할 경우 주전공	48(30)	48(40)	50(40)
	부전공	24(9)	24(9)	25(9)
교직		16	16	16

비고: ( )의 숫자는 전공 필수 과목의 최대 학점 수.

를 위한 세부 방안을 확정하였다. 그 세부 방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1. 허용 학과의 범위: 의학계를 제외한 전 계열 학과로 인문·사회계 학과는 인문 사회계 각 학과를(계산 통계학, 수학 부전공으로 지망 가능), 이공·생약·농학 계열은 인문·사회·이공·생농계 각 학과를, 예술대학은 소속 대학 각 학과를, 가정 계열은 가정대학 소속 각 학과를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다.
2. 부전공 허용 인원: 학과별 학년 정원의 100%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50명(이공·생농계 학과는 30명)을 초과하지 못한다.
3. 부전공 이수자 선발 방법 및 기준: 부전공 이수 신청 직전 학기의 성적 평점 평균 B-(2.7) 이상인 자 중에서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4. 부전공 제도의 적용 대상: 1974년 이후 입학자 및 동등 과정을 이수하는 자(40학점 이상 이수자).
5. 부전공 허용 시기: 2학년 2학기부터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6. 부전공 이수 학점 및 인정 기준: 부전공 학과에서 제공하는 전공 교과목 중에서 24학점 이상(부전공 학과의 전공 필수 과목 9학점 이상 포함)으로 평점 평균 C-(1.7) 이상이어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그런데 실제 부전공제를 실시한 결과, 당초의 기대와 달리 신청자가 매년 학사 과정 정원(기초 과정 학생 제외)의 5% 미만으로 나타나는 등 학생들에게 외면을 당했다. 또 부전공제는 계열별 입학생들의 과 배정 과정에서 나타난 모순이나 불만을 완화시키는 데에도 큰 구실을 하지 못했다.

대학 당국은 이런 상황을 수업이 겹치지 않도록 시간표를 조정하거나, 부전공 이수 교과목을 복수 개설하거나, 신청 자격을 완화하는 등 주로 기술적인 측면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그렇지만 부전공 신청자는 거의 늘지 않았다. <표 3-3-3>에서 알 수 있듯이 1977년에서 1985년 사이의 기간 동안 겨우 100명대를 유지하였을 뿐이다.

이러한 실패가 발생한 배경으로는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시간표의 중복이나, 홍보 부족에도 어느 정도 원인이 있었고, 부전공하는 학과의 교수 및 학생들과 교류가 부족하여 부전공 학과에 대한 유대감이나 소속감이 결여되는 것도 큰 이유 중의 하나였다. 무



그림 3-3-1 1975년 대  
형강의실 수업 광경

〈표 3-3-3〉 부전공 이수 졸업자 현황(1976~1985년)

(단위: 명)

대학	학년도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인문대학		29	22	25	25	27	36	28	57	36
사회과학대학		27	17	19	12	11	23	18	50	19
자연과학대학		18	28	36	26	14	17	12	7	11
가정대학		4	11	7	14	20	18	17	22	7
경영대학		4	5	4	1	2	2	2	2	4
공과대학		1	9	6	8	10	18	25	0	7
농과대학		9	8	11	18	24	42	26	7	11
법과대학		0	3	0	0	1	0	2	5	3
사범대학		14	36	25	38	16	15	15	7	8
계		106	139	133	142	125	171	145	157	106

출전: 서울대학교50년사편찬위원회, 1996 『서울대학교50년사』, 388쪽.

엇보다 사회에서도 부전공제를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았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학생 개개인의 교육 내용을 원하기보다는 학생의 소속 학과를 더욱 중시하는 풍토를 가지고 있었다.

## 2) ‘면학 분위기 조성 시책’ 과 법정 교양 필수 과목 증가

### (1) ‘긴급 조치 9호’와 면학 분위기 조성 시책

서울대학교가 관악 캠퍼스로 이전한 1975년 1학기에 긴급 조치 9호(1975년 5월 13일)가 발동되었다. 그리고 위압적 분위기 속에서 이른바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한 여러 시책을 당국에서 시달하였고, 학사 운영은 전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경직되어 갔다.

#### ① 졸업 논문제 실시

1975년 6월 문교부는 서울대학교에 ‘대학 졸업 제도의 개선 방안’을 시달하였는데, 그 속에 졸업 논문제와 종합 시험제 실시에 대한 취지와 목적, 기본 방침, 내용, 시행 방법 등이 제시되어 있었다. 이때 제시된 ‘개선 방안’의 취지 가운데 일부를 보면 다음과 같다.

대학 입학의 관문만 통과하면 졸업은 거의 자동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는 잘못된 대학의 풍토로 인하여 학업에 임하는 학생의 태도는 안이하고 학습을 조장하는 동기는 박약하다. 더욱이 지난 수년간 한국의 대학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휴강 사태의 만성화 현상은 학생들의 학업에 임하는 태도를 안이하게 하고 학습 동기를 약화시키는 데 크게 작용하였다. …… 이와 같은 점에서 대학 교육의 내적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대학의 졸업 조건을 강화하고 그럼으로써 입학만 하면 졸업은 보장된다는 안이한 학습 태도를 시정해야 할 필요는 절실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요청도 점차 높아 가고 있다.

당시 빈번하였던 휴강 때문에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태도가 더욱 안이하게 되었으므로, 졸업 조건 강화를 통해 학생들의 면학 태도를 바꾸겠다는 발상이었다. 그리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침으로, 소요 학점 취득 외에 졸업 논문 또는 종합 시험을 통과해야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과에 따라서는 실험 실습 보고, 실기 발표 또는 졸업 시험으로 논문을 대치할 수 있고 1977년 2월 졸업 예정자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종합 시험제는 대학의 교양 및 전공 과정 중에서 학사 학위 취득에 필요한 기초적 지식을 평가하여, 학생들에게 교양 과정 및 전공 과정 기초를 확고히 구축하게 한다는 명분으로 계획되었다. 이는 1960년대 실시되었던 학사 고시제의 한 변형이라 할 수 있는데, 다만 이때에는 종합 시험보다는 졸업 논문 위주로 졸업 사정을 실시하고, 종합 시험은 어디까지나 대학 자율로 시행하도록 한 점이 달랐다.

서울대학교는 1976년 4월에 있었던 학칙 개정 당시 학칙 제64조에 졸업 논문제 실시를 반영하였고, 1976년 7월 20일에 학위 수여 규정의 전면 개정을 통해 이를 보다 구체화되었다. 그리고 법학과(1979년에 졸업 논문제로 전환), 수의학과, 치의학과, 의학과 등은 졸업 종합 시험을 실시하고, 체육교육과와 음악대학(국악과 제외), 미술대학 각 학과는 실기 시험을 치르기로 결정되었다. 위의 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는 1977년 2월 졸업자부터 졸업 논문제가 시행되었다.

그런데 졸업 논문제는 학칙에는 없었지만 이미 전부터 인문·사회계의 많은 학과에서 실시되고 있어서 인문·사회계 쪽에서는 별다른 충격을 받지 않았다. 다만 학생들의 관심은 주로 종합 시험제에 쏠려 있었다. 그러나 종합 시험제는 1977년 4월 28일에 학장회는 2학년 말에 실시할 계획임을 학생들에게 주지시켜 주도록 교무처가 요구한 이래 그에 대한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고, 결국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 ② 수업 관리의 본부 집중

1975년 3월 초 당국은 대학의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① 수업 일수 엄수, ② 학습 과제 실시, ③ 과목별 논문 제출 제도(Term Paper) 권장, ④ 강의 평가(Course Evaluation) 실시 권장, ⑤ 성적 평가 방법 개선 등을 시달하고 이를 위해 교수들이 교수 요목(Syllabus)을 활용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수업 일수와 강의 시간 수가 부족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학기 초에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그 결과를 강의 계획서에 반영, 제출하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이어서 7월 25일의 학칙 개정 시에는 수업 일수 1/4 이상 결석자의 학점을 불인정한다는 조항이 추가되었으며, 4월 초부터는 교수의 출강 및 학생의 출석에 대한 관리 방안이 마련되었다.

### 1. 교수 출강 관리

- 교수의 출강: 담당 교수는 강의 시작 전에 각 학과 사무실에 비치된 출강부에 날인함.
- 교수의 출강 상황 파악 및 보고: 각 학과장은 강의 담당 교수의 출강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며 학과 조교 및 사무직원을 동원하여 담당 교수의 휴강 상황에 대한 일일 보고를 작성하여 본부(수업과)에 제출.
- 휴강 보고는 별도의 양식에 의해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함.

### 2. 학생 출석 관리

- 출석 점호의 방법: 수강 학생 수 80명 정도 이하는 담당 교수가 직접 호명, 그 이상은 출석 카드를 사용하여 확인함(출석 카드 양식 별도).
- 출석부 비치 및 관리 책임: 출석부의 비치 및 관리 책임은 각 학과장에게 있으며 조교 및 사무직원을 동원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관장한다. 즉 학생 출석 상황에 대한 파악, 학생 출결에 관한 일계표 작성 및 본부(수업과) 제출, 출석 불량 학생에 대한 독려 및 경고.

이는 학생은 물론이요, 교수들의 출강도 엄격히 관리하려는 시도였다. 이후에도 당국은 매년 전국대학교무처장회의를 통해 “수업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통보하였다. 이러한 교수 출강 관리와 학생 출석 관리는 학생 지도를 교육 내용에 의해 접근한다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형식적인 것이었고, 특히 출석 카드는 실시한 지 얼마 안 되어 유명무실했다. 예를 들어 1978년 1학기에는 학생들의 동맹 휴학 사태가 있었는데, 실제로 동맹 휴학 기간 중 거의 대부분의 수업을 하기 못했음에도 휴강 상황이 제대로 보고된 날은 거의 없었다.

교수 출강 관리, 학생 출석 관리와 함께 1976년 2학기부터는 이른바 학생 점심시간

시차제가 실시되었다. 이것은 1976년 4월,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학장 회의록, 1976년 4월 1일자) 종전에는 4교시와 5교시 사이에 점심시간을 비워 두고 수업 시간이 편성되었는데, 시차제 실시에 따라 수업 시간을 편성할 때 점심시간을 따로 비워 두지 않고 단지 3~5교시 사이에 학생들이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시간표를 편성한다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당시 학생 집회가 대체로 점심시간을 전후해서 있었기 때문에 시간표 편성 방식을 바꾸어 그것을 막아 보려는 것이라는 소문이 학내에 퍼지기도 하였다.

또한 점심시간 시차제와 함께 수업 시간표 편성 방식이 전과는 전혀 달라졌다. 1976년 1학기까지는 3학점짜리 강의의 경우 3시간 연속 또는 2시간 연속, 1시간은 따로 강의 시간을 배정하는 것이 상례였는데, 2학기부터는 각각 다른 요일에 1시간씩 배치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이다. 한 과목의 강의 시간을 집중 배치하지 않고 각각 다른 날로 분산시킨 것은 연속하여 집중 강의를 필요한 과목의 교수에게 불편을 주었으며, 특히 교양 과정의 법정 필수 과목, 전공 필수 과목 등의 이수 체계와 관련되어 학생들의 선택 과목에 대한 선택의 여지를 크게 축소시켰다.

### ③ 과제 처리일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초까지 대학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 중의 하나가 이른바 '과제 학습일' 또는 '과제 처리일(Study Day)' 이었다. 과제 학습일은 1972년부터 "방대한 학습량을 자율적으로 흡수하게 하기 위해" 학기 중 일정 기간 실시되어 왔다. 또한 실험 대학 운영에서는 교수 방법의 개선으로 과제를 부가에 의한 자율 학습으로 학습 효과를 높인다는 것이 교육 내실화를 위해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 이에 따라 문교부는 실험 대학으로 지정한 대학에 교육 방법 개선을 위한 개혁 항목으로 과제를 부과와 과제 도서실 설치를 권장하는 한편, 1975년 이후 전국대학 교무처장회의를 통해 면학 분위기 조성 방법의 하나로 과제를 부과를 계속 권장하였다. 명칭도 1975년부터는 과제 처리일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과제 처리일의 시기는 규정으로 정해진 바 없고, 대체로 학생들의 동향에 따라 편의적으로 정해져 실시하였다. 1970년대 대학가에서는 1학기의 4월 3일, 4월 19일, 5월 16일과 2학기의 10월 17일을 전후하여 학생 집회가 집중되는 것이 상례였고, 학교 당국에서는 위 기간을 전후하여 중간고사 일정을 조정하거나 과제 처리일로 정해 며칠 간의 사실상의 휴가에 들어갔다. 계열별 모집 이후 기초 과정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공동 관리제로 전환됨에 따라 기초 과정 시험 기간은 자연히 전공 과정 학생들에게 과제 처리일로 제공되었다. 그러나 이 기간 중에도 학생들에게 과제가 부과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 1980년대 들어서는 위의 기념일 이외에 5월 18일이 추가된다. 그러나 이 때에도 앞서와 마찬가지로 과제는 거의 부과되지 않았다.

결국 과제 처리일은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자율 학습 기간이라는 명분 아래, 특별한 날을 전후하여 학생들의 기념행사 집회를 사전에 봉쇄하려는 유신체제의 부산물일 뿐이었다. 1980년대 들어서는 이와 같은 성격의 과제 처리일이 없어지고 기초 과정 시험 기간에만 전공 과정 학생에게 주어지는 과제 처리일만 남았다. 이는 1970년대보다 더욱 격렬하고 빈번하게 학내의 학생 집회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수업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문교부의 강경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었다. 하지만 만성적인 학생 소요 속에서 실제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학기는 거의 없었다.

## (2) 법정 교양 필수 과목의 증가

앞서 교과 과정 편제에서 언급하였듯이 1976년을 전후하여 기존의 교련 과목에다 국민 윤리와 한국사 등이 법정 교양 필수 과목으로 추가되었다.

학생 군사 교육(교련)은 일찍이 1969년부터 시작되었는데, 1970년에 3학년까지를 교육 대상으로 하며, 180시간 이수에 6학점을 배정하고, 이수자에게는 군복무 기간 단축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정해졌다. 그런데 1975년 2학기부터는 이해 8월에 발표된 '대학일반군사교육시행방안'에 의거하여, 학생 군사 교육이 더욱 강화되었다. 1975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대학일반군사교육강화지침'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1. 교육 수준을 종전 신병 과정에서 하사관 및 간부 후보생 과정으로 재책정한다.
2. 주당 4시간, 한 학기 15주 총 60시간을 실시하며, 1976년부터 1학년 학생들에게는 병영 집체 훈련 10일(80시간)을 별도로 부과한다.
3. 교육 대상자는 1-3학년 전체 남학생으로 확대한다(예비역, 군 위탁생 포함).
4. 교육 편성은 반드시 호국단 편제에 준한다.
5. 1학기 1/6이상(10시간) 결석자는 군사 교육 거부자로 판단, 징병 검사 연기, 현역 복무 기간 단축 등 병역법상의 수혜 대상에서 제외한다.
6. 군사 교육은 타 과목과는 달리 계획 책정된 시간 중 단 1시간도 누락 실시할 수 없다.
7. 군복무 혜택: 전 과정 이수자 6개월, 2학년 이수자 4개월, 1학년 이수자 1개월(단, 군사 교육 거부자, 학점 미취득자(한 학기라도 F학점을 받았을 경우), 학적 변동자 제외)

이렇듯 교련 교육이 강화된 배경에는 긴급 조치 4호 해제 이후 심화된 유신체제 반대 운동과 1975년 4월 베트남의 공산화가 있었다. 국제 정세 변화에 위기의식을 느낀 박정희 정권은 1975년 5월 13일에 국내의 반체제 운동을 억제하기 위해 긴급 조치 9호를 발동하였고, 동시에 대학에 학도호국단을 설치하고 군사 교육을 강화하려 하였다.

교련 과목이 법정 교양 필수 과목으로 지정된 후 강압적인 군사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반발이 거세어져 집단행동으로 나타났지만, 정부와 대학 당국은 학생들을 통제하고 학생 운동을 약화시키려는 의도에서 교련 과목 이수를 계속 강제하였다.

1975년 11월초부터는 교련 정규 시간 외에 학도호국단 검열도 실시하였으나, 이를 학원의 병영화라고 생각한 학생들은 검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또 병영 집체 훈련이 실시되면서 문무대에 입소할 때에는 두발 문제로 마찰이 생기기도 하였는데, 당국은 1976년부터 군장 검사를 실시하여 장발을 교련 거부로 판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 버렸다.

1976년 6월 19일에 ‘교육법시행령’ 제119조가 개정되면서부터는 국민 윤리와 한국사가 법정 교양 필수 과목이 되었다. 사실 국민 윤리는 1969년부터 일부 대학에 설치되었다가 이미 1970년 2학기부터 교양 필수 과목으로 설정되었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교육법시행령에 규정된 법정 필수 과목은 아니었는데, 1976년 초에 문교부 초도순시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반공 담당 교사 활용을 지시함에 따라 법이 개정되었다. 이해에는 또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국민 윤리 교육 담당자의 재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윤리교육과가 신설되었다. 국민 윤리는 3학점이었고, 강좌 내용은 인간론, 전통 윤리, 체제론, 공산주의 비판 등 네 분야로 구성되었다.

한국사도 1976년부터 기초 과정 학생들에게 단일 국사 과목인 한국사를 2학점씩 필수로 이수하게 하였다. 그러나 갑자기 늘어난 강의를 담당할 교수를 확보하기 곤란하여 한 교수가 많은 강의를 부담하기도 하였고, 한 학급당 200~300명이 수강하는 대형 강의를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표준적인 강의안이나 교재가 없어서 대학에 따라, 교수에 따라 강의 내용과 수준이 천차만별이었다. 강의 내용이 고등학교 국사의 반복일 뿐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 제 4 절 법정 교양 필수 과목의 지속과 계절 수업 시행(1980~1990년)

### 1) 신군부의 '수업 충실화 방안' 과 학사 운영 강화

#### (1) 수업 충실화 방안

학원 내부에서 민주화 운동의 열기가 더해 가고, 한편에서는 대학 자율화를 위한 대학 개혁 논의가 활성화하는 시점에서 1980년 5월 17일 신군부에 의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고, 이후 대학은 118일 동안의 휴교에 들어갔다. 대학이 휴교령 속에서 동면하고 있던 7월 25일에 문교부에서는 대학의 안정을 해치는 것으로 지목된 학내의 시위를 방지하려는 의도에서 '대학 학사 운영 정상화 방안'을 각 대학에 시달하였다. 여기서 표방한 것은 "각종 학내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의 불만 요인을 제거하여 학원 면학 분위기를 정상화함으로써 대학 교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었으나, 주된 내용은 "수업의 충실화와 학내 질서의 확립"에 두어져 있었다. 즉 대학에서의 수업을 철저히 진행시키고 수업을 방해하거나 불법적인 학생 활동에 참여하는 등의 행위를 절대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이었다. 이에 의하여 제시된 수업 충실화 방안과 학내 질서 확립 방안을 보면 다음과 같았다.

1. 수업 충실화: 법정 수업 일수의 철저한 준수, 한 명의 학생이 출석한 경우에도 수업 실시, 수업 시간의 출석 엄격 점검 및 일정 시간 결강 학생의 학칙에 의한 학점 불인정 등 엄격 처리, 결강 사전 승인제 및 보강 계획 이행을 점검, 조교 등의 대리 강의 엄금, 교수 요목의 철저 이행, 과제물의 부과와 평가, 비전공자의 강의 지양, 학사 경고제의 엄격 적용, 강의 시간의 존엄성 유지(품위·복장·언행), 학업 성적의 엄정성 유지, 강의 시간 중 학업 진도 시험 실시, 졸업 논문 지도 철저, 교양 과목의 중견 교수 담당 이해(시간 강사의 담당을 지양).
2. 학교 질서의 재확립: 수업 방해 행위 및 거부 행위 엄단(수업의 신성 불가침성 침해 불용, 수업 방해자·수업 거부자 학원으로부터 추방), 불법 조직 활동 금지, 상벌 질서 확립, 학생 복지 시설 설비의 확충 및 운영 개선.

이와 같은 방침과 함께 1981년부터 전일제(全日制) 수업이 실시됨에 따라 수업 시간표 편성 기준이 다음과 같이 만들어졌다.

1. 전임 교원은 주 4일 이상 강의를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요일을 포함하여 연속 3일 이상 강의를 담당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2. 수업 시간 편성은 1일 11교시까지 편성하되 1-5교시에 1/2, 6-11교시에 1/2이 되도록 하며 특정 요일이나 교수(2,3교시 및 6,7교시)에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3. 자연, 이공계 대학(원)에서는 실험 실습 시간을 오전과 오후로 분산 편성하여 실험실의 활용도를 높임과 동시에 강의실 배정의 원활을 기하여야 한다.
4. 실험, 실습, 체육, 교련 시간 이후에는 가급적 한 시간 정도 휴식할 수 있도록 편성하고 학생의 점심 식사는 3-5교시 중에 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5. 부전공 과목의 수업 시간 편성은 2학년은 월·수·금 10,11교시, 3 4학년은 화·목 10,11교시와 토요일 6교시로 편성한다.
6. 인문·사회계 및 예술계 대학(원)의 교과목은 2시간 연속 강의(100분)를 포함하여 2일이 되도록 편성하고, 자연·이공계 대학(원)의 강의 과목은 1일 1시간씩 편성하되 실험 실습은 연속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편성한다.
7. 일정한 기간에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교과목은 실시 1주일 전에 반드시 수업과를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은 일련의 면학 분위기 조성 시책과 졸업 정원제, 시간표 편성 방침 등의 결과 1981년부터는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문교부가 목표했던 면학 분위기 조성이 이루어졌다. 제5공화국 출범 이후의 면학 분위기 조성 시책은 1970년대의 면학 분위기 조성 방침을 더욱 강화한 것이었다. 이러한 당시의 학내 분위기는 행정 당국이 대학에 대해서 학사 관리, 학생 지도 등 여러 측면에 걸쳐 세부적인 사항까지(심지어는 수업 시간 편성 원칙까지도) 획일적인 지시와 통제를 계속해 온 결과였다.

## (2) 졸업정원제 실시와 학사 운영 강화

1981학년도부터 졸업정원제를 시행함에 따라 졸업 정원을 초과하여 모집한 학생을 인위적으로 탈락시킬 규정을 마련해야 했다. 1981년 7월 3일 '서울대학교 학사감원규정'이 제정되었는데, 이 규정은 9월 4일 개정되었다. 학사감원규정에 따르면 입학 후 4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자의 수가 110%를 초과하는 경우, 학사감원기준 성적순에 의해 학과별 진급인원에 포함되지 아니한 자는 감원 하도록 했다. 즉, 2학년에 3학년 진급시 졸업정원의 20%를 강제 탈락시키고, 나머지 10%는 4학년을 마치면 수수료증을 주도록 했다.(졸업정원제는 졸업정원의 130%를 모집) 학사감원 성적은 취득한 전교과목의 평

점 합계를 학기당 수강신청 기준학점의 합계(66학점)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3학년 진급시 일률적으로 20%를 감원시키는 데 따른 문제점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학사 징계 제도를 대폭 강화하였다. 강제탈락 시키기 전에 학사 징계 제도를 통해 미리 그 수를 줄여보자는 의도였다. 학사감원규정 제정 전에 미리 이루어진 학칙개정에서 학사경고와 학사근신의 징계 기준은 기준평점을 이전에 비해 상향 조정하고, 학사제명은 훨씬 수월하도록 바꾸었다.

- 학사경고: 직전 학기 성적 평점 평균 2.0(C) 미만, 3교과목 이상이나 6학점 이상이 F인 자(이전에는 1.7 미만)
- 학사근신: 한 학기 성적 평점 평균 1.3(D+) 미만인 자(이전에는 1.0)
- 학사제명: 학사근신 2회, 학사경고 1회에 학사근신 1회. 연속하여 학사경고 2회 또는 통산하여 학사경고 3회(이전에는 2회 학사경고자가 다시 학사경고를 받을 경우), 3개 학기 이상 이수한 전교과목 평점 평균이 각 학기 말에 2.0(C) 미만일 경우

학사감원, 학사징계 강화와 더불어 1982학년도 2학기부터는 전공 과정에 상대평가제를 실시하였다. 상대평가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원칙은 세워져 있었으나 시행을 강제하지는 않다가 1975년부터 기초 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전공과정의 경우엔 교수의 재량에 맡겼다. 처리규정은 A는 20%, B는 30%, C는 40%, D는 10% 이하였다. 그러다 이때 전공 과정에 대해서도 상대평가를 실시한 것인데, D 이하를 C에 포함시켜 C 이하 50%로 조정하였다.

## 2) 이데올로기 비판 교육과 법정 교양 필수 과목 운영

### (1) 이데올로기 비판 교육

1980년의 '7·30 교육개혁조치'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바로 국민정신 교육의 강화였다. 이는 공산주의 이론·종속 이론·해방 신학·네오마르크시즘 등의 '급진적인 이데올로기'가 대학가에 파고들어 일부 학생들이 '좌경화' 현상을 나타내므로 이데올로기 비판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 기초하였다.

문교부는 1981년 1월 17일에 열린 전국 대학 학생처·과장회의를 통해 대학별 이데

올로기비판교육연구회의 설치를 권장하였다. 이어 2월 18일에 이규호 문교부 장관은 세종 문화 회관에서 ‘생존과 번영을 위한 우리의 결단’이라는 강연을 통해 다시 이데올로기 비판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때마침 1982년 3월 18일에 발생한 부산 미문화원 방화 사건으로 대학에서 이데올로기 비판 교육이 절박하다고 인식한 문교부는 4월 6일에 이데올로기비판교육연구회를 전국 4년제 대학에 동시에 설치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4월 13일과 17일에 있었던 전국대학교무처·과장회의를 통해 그 방침을 권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문교부 관계관이 전국 각 대학에 현지 출장하여 이데올로기비판교육연구회의 설치를 독려하고, 설치에 대한 협의를 가짐으로써 5월에는 동 연구회의 설치가 완료되었고, 8월에는 전국대학 이데올로기비판교육연구회책임교수협의회가 조직되었다.

서울대학교도 위와 같은 문교부 방침에 따라 1981년 사회과학대학·법과대학·인문대학·사범대학 등의 관계 교수 14명으로 서울대학교 현대사상연구회를 조직하였고, 1982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동 연구회의 1982년 연간 주요 계획 사업은 ① 현대 사상 연구 시리즈(2학기), ② 추천 도서 목록 작성(5월~8월), ③ 비판 교육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2학기), ④ 교수 세미나 1회, ⑤ 교양 선택 과목 신설 등이었다. 이 중 2학기부터 교양 선택 과목으로 신설하려던 과목은 ‘현대 사조론’, ‘사회주의 경제론’, ‘사회 철학’, ‘남북한 정치론’, ‘제3세계론’ 등이었으나, 기초 연구 결과 다시 기존의 사상사 과목들(사회사상사, 정치사상사, 경제 사상사 등)의 범주에 포함시켜 16주 중에서 1주는 이데올로기 비판 강좌를 마련하기로 하였고 독립 과목으로 ‘제3세계와 한국’과 ‘현대 사회주의의 분석’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그 중 ‘현대 사회주의의 분석’만이 정치학과 교과과정분과위원회의 양해를 얻어 1983년 1학기부터 실험 과목의 하나로 설치되었다.

## (2) 법정 교양 필수 과목 교육

1970년대 실험 대학 운영 때와 마찬가지로 1980년대 ‘교육 개혁’ 조치들도 공통적으로 교양 교육의 강화와 내실화를 내세웠다. 하지만 실제 교육개혁 조치의 내용은 교양 과정에서 교련과 국민 윤리와 같은 정책 과목을 일정하게 이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교양 교육 강화가 이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필수 과목을 축소하고 선택 과목을 확대해야 한다. 그렇게 봤을 때 이들 법정 교양 필수 과목의 이수는 사실상 교양 교육의 실질적인 강화와는 상충되는 것이었다.

1970년대 중반 이후 정책 과목들은 특별한 설치 목적 아래 그 운영은 계속 강화되었고, 1980년대 졸업 정원제를 시행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는 마찬가지였다. 정책 과목으로 운영되었던 국민 윤리, 한국사, 교련 과목 각각을 자세히 보면 다음과 같다.

#### 국민 윤리

1979년 '10·26 사태' 후 1976년부터 법정 필수 과목으로 3학점을 들어야 했던 국민 윤리 교육에 대해 비판적인 여론이 일었다. 1980년 2월에 열린 전국대학교교무처장회의는 이를 폐지할 것을 논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81년 이후 국민 윤리 교육은 오히려 1970년대보다 더욱 강화되었다. 학생 시위의 확산 방지와 예방의 차원에서 국민 윤리 과목을 오히려 더욱 강화한 것이다. 1981년부터 국민 윤리를 국민 윤리 I 과 국민 윤리 II (각각 2학점씩)로 나누고 1학년과 2학년에서 각각 수강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변화는 7·30 교육개혁조치에서 제시된 정신 교육과 정치 교육의 연계를 통한 국민정신 교육의 추진과 함께 이루어진 조치였다.

#### 교련

1975년의 긴급 조치 9호 발동 이후 더욱 강화된 교련 교육은 졸업 정원제 실시 이후인 1981년 1월 29일에 '학생군사교육실시령'이 개정됨에 따라 크게 조정되었다. 교련을 교련1, 교련2, 교련3으로 나누고, 대학 3학년을 교련 교육 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교련1은 교내 군사 교육으로 주당 2시간, 1학점을 배정하였고, 교련2는 병영 집체 훈련으로 훈련 기간을 종전 10일에서 6일로 줄인 대신 1학점을 배정하였다. 교련3은 전방 부대 입소 교육으로 2학년을 대상으로 6일간 실시하고 역시 1학점을 배정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대학에서 1학년과 2학년 기간 동안에 이수해야 하는 총학점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6학점이었다. 교련 이수에 대한 특혜로 2년 이수자에게 3개월, 1년 이수자에게 1.5개월의 군복무 기간을 단축하는 혜택을 받도록 조정되었으나, 나머지 감점 규정이나 교련 거부자 처리는 종전과 마찬가지였다. 교관은 현역에서 예비역으로 교체하였다.

#### 한국사

1982년에 작성된 「대학교양과정 개편연구」는 앞서 1981년에 작성된 「대학 기초교양 교육 개선을 위한 교과목 개발 연구 보고서」의 구상에 따라 보다 전문적인 국사 과목을 개발하였다. 이는 기존 국사 과목이 중등 교육 과정의 '국사'와 이름이 동일하여 신선

미가 없고, 표준적인 강의안이나 교재가 없으며, 교수 확보가 곤란하고 문화사적 이해가 결여되어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이었다. 「대학교양과정 개편연구」는 기존의 한국사보다는 범위가 좁고 전문적이지만, 전공 과정에서 다루는 과목처럼 지나치게 특수하거나 전문적이지는 않은 바람직한 강좌의 제목으로 ‘한국인의 미의식’, ‘한민족과 과학기술’, ‘한국인의 공동체 의식’ 등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1983년 ‘한국인의 역사 의식’ 과 ‘근대 한국의 민족주의’ 두 과목이 한국사 대체 과목으로 신설되었다. 그리고 1989년 ‘한국 문화와 불교’ 와 ‘조선 후기 사회와 실학’ 두 과목이 추가되었다.

이상의 국민 윤리, 교련, 한국사 외에도 체육이 1976년부터 법정 필수 과목이 되었고, 이와는 별도로 서울대학교는 국어와 작문을 교양 필수로 지정하였다. 또한 교양 선택으로 분류되어 있던 하나 영어 3학점은 실질적으로 필수 과목이었다. 그런데 이들 국민 윤리, 한국사, 교련, 체육 과목의 총학점 수는 18학점(1976~1980년)~ 21학점(1981년 이후)에 달해 교양 과목 최저 이수 학점인 42학점(1981년 이전)~ 44학점(1981년 이후)의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들 정책 과목들로 인하여 학생들은 수강 과목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선택의 여지가 크게 줄어들었다. 그리고 또 다른 교양 과목인 인문·사회·자연 과학 계열의 과목의 경우는 각 영역별로 개설된 과목에 대하여 학생이 속한 학문 계열에 따라 선택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역 자체가 필수 과목으로 부과되었다. 특히 자연계, 공학계, 교육 자연계에 속한 학생들은 자연과학 계열의 과목으로 기초 과정에서 개설된 과목 전체를 들어야 하기 때문에 수강 교과목 선택의 자유가 거의 제한되는 형편이었다.

### 3) 계절 수업과 교양 과목 특별 시험 시행

원래 계절 수업과 교양 과목 특별 시험제는 1970년대 중반 실험 대학의 여러 방안 중 하나인 ‘졸업 제도의 종합적 개선’ 사업으로 계획한 것이었다. ‘졸업 제도의 종합적 개선’은 수학 연한 4년에 융통성을 부여하여 우수한 학생이 학점을 앞당겨 취득하여 졸업을 앞당길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안을 모색하였다.

1. 학업 성취 능력에 따른 학점 취득: 학점 초과 취득 및 제한 취득(전 학기 성적이 극히 우



수한 학생은 다음 학기에 학기당 상한 학점 이외에 3학점(1과목)을 더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전 학기 성적이 일정 기준에 미달한 학생은 수강 신청 학점을 정도에 따라 제한), 학점 취득 특별 시험제(1학년 교과목 중 일부에 대해 희망자에 한해 특별 시험을 실시, 일정 수준에 도달한 학생에게는 해당 과목의 이수를 면제하고 12학점의 범위 내에서 학점을 부여).

2. 복수 전공제: 성적이 일정 수준에 도달한 자로서 희망자에 대해 수학 기간을 1-2년 연장, 타 학과 과목 중 전공 학점과 동일한 학점을 취득하였을 경우 2개의 학위를 수여한다.
3. 계절 학기제: 1년 2학기제를 원칙으로 하되, 시설·교수 등 여건이 구비된 대학은 여름 방학과 겨울 방학 기간 중에 계절 학기를 개설, 희망하는 학생에 한해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수 학점은 6학점 이내, 학기의 개설 기간은 4주 이상으로 한다. 이전 방학 기간 중에 실시돼 오던 써머 스쿨, 윈터 스쿨과 유사한 것으로 다만 보충 수업의 성격을 가졌던 제도를 정규 수업으로 전환, 법적인 뒷받침을 하도록 한다.

요컨대 우수한 성적 취득에 의한 초과 학점 취득, 특별 시험 합격과 계절 학기 수강을 통한 학점 취득의 방법 등으로 단위 학년 중에 취득할 수 있는 학점 수를 늘려 3년 만에 졸업할 수 있게 하고, 이러한 조기 졸업 가능자가 졸업을 보류하고 다른 학과의 전공 과목을 이수할 경우 4~5년 동안에 2개의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시설 확충과 교수 확보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았다. 특히 계절 수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학점당 등록금 징수, 강사로 지급, 개설 과목 결정, 최소 수강 인원, 학사 징계 등의 사항이 학칙상 또는 법적으로 선결되어야 했다. 여기에 더하여 교수와 학생 모두가 이 새로운 제도에 대한 인식이 없는 상황이어서 학내 여론도 이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결국 졸업 제도의 종합적 개선안 가운데 학점 초과 취득 및 제한 취득 방안만 1975년 2학기부터 시행할 수 있었다.

1980년대 초 정부는 졸업 정원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시 계절 수업과 교양 과목 특별 시험의 시행을 추진하였다. 즉, 1983년 정부는 졸업 정원제 완화책으로 조기 졸업자는 정원 외로 한다는 안을 내놓았는데, 계절 수업과 교양 과목 특별 시험제가 조기 졸업을 가능하게 해주거나 모자라는 학점을 보충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고취할 것이라는 구상이었다. 이에 대해 정부의 면학 분위기 조성책이 정치적 의도가 짙다는 점, 교수 인력의 확보가 어렵고 교수의 연구 기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는 의견도 많았다.

그런 가운데 1983년 대학교육협의회가 문교부에 ‘대학 운영 개선안’을 건의하면서 여름 학기제 신설 방안은 구체화되었다. 이 건의안 가운데 “여름 방학 중에 여름 학기를 신설하여 학생들에게는 조기 졸업의 편의를 제공하고 일반 사회인에게도 대학을 개방하여 고등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리고 1983년 11월에 문교부는 학기제 개편을 발표하면서 이 내용을 반영하였다.

서울대학교는 1984년 4월 26일 학장회에서 1984년 여름 방학부터 계절 수업을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때 결정된 계절 수업 운영의 원칙은 ① 정규 학기로 인정하지 않고 단지 학점만 산입하며, ② 여름 방학 중 실시하되 학사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③ 개설 과목은 학사과정의 교양 과목과 전공과목 중 일반적인 과목 또는 가급적 수강 대상의 폭이 넓은 과목으로 하고 학과당 1과목을 기준으로 전체 100과목 내외를 개설하며, ④ 과목별 수강 인원은 20명 이상, 강의 시간은 주당 3시간씩 6주간 실시한다는 것이었다. 1984년 여름 29개 강좌에 597명이 수강 신청한 것을 시작으로 계절 수업의 강좌 수와 수강 신청 학생 수는 <표 3-3-4>와 같이 매년 큰 폭으로 늘었다. 특히 시행 5년 만에 수강 신청 학생 수가 10배에 이르러 계절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폭발적인 증가 추세와 더불어 계절 수업 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도 높아졌다. 1992년에 작성된 「대학교육에서 계절수업의 역할」에 제시된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교수와 학생 모두 개설 과목이 다양하지 못하다는 점, 강좌당 학생 수가 너무 많다는 점, 냉방 시설의 부족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계절 수업의 강의 담당자 중 전임 교수의 비율이 1984년 79.3%에서 1990년 37.1%까지 떨어지면서 수업의 질에 대한 의문도 높아졌다.

한편 계절 수업과 함께 교양 과목 특별 시험제도 1984학년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조기 졸업 기회를 확대한다는 목적과 함께 특정 기초 교과목

<표 3-3-4> 계절 수업 실시 현황(1984~1990년)

구분 \ 연도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과목 수	29	30	35	39	42	56	49
강좌 수	29	34	43	45	72	114	116
수강 신청자(명)	597	1,374	1,340	1,372	3,001	5,228	6,295

출전: 서울대학교, 1992 『대학교육에서 계절수업의 역할』, 8쪽.

〈표 3-3-5〉 교양 과목 특별 시험 응시자 및 합격자 현황(1984~1990년)

(단위: 명, %)

구분 \ 연도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응시자	2,400	807	1,540	1,504	1,337	1,147	1,971
합격자	12	30	238	257	307	456	495
합격률	0.5%	3.7%	15.5%	17.1%	23%	39.8%	25.1%

출전: 서울대학교50년사편찬위원회, 1996 『서울대학교 50년사』 446쪽·776쪽.

의 학력이 매우 우수한 학생에게 그 과목의 수강을 면제하여 좀 더 수준 높은 교과목 또는 인접 교과목을 수강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도 있었다. 또 졸업 정원제 이후 학생이 급격히 증가한 상황에서 교양 교육의 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1984~1985년에 영어, 수학 두 과목을 보다가, 1986년에 국어, 작문을, 1987년에 독어, 불어 과목을 추가하였다.

그런데 교양 과목 특별 시험 역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 시험을 통해 합격한 학생에게 해당 교양 과목 이수를 인정해 주는 것이 실제로는 교양 과정 교육의 의의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었다. 또 합격자도 적어 조기 졸업 기회 확대라는 애초의 취지에 맞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 4) 교과 과정 개선 방안과 실험 과목 개발

1980년의 7·30 교육개혁조치 이후 서울대학교는 교양 교육 과정의 개편에 착수하였다. 먼저 1981년까지는 교양 교육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그 연구 결과가 「대학 기초과정의 교양교육 개선을 위한 연구」(1981년 4월)(이하 「개선을 위한 연구」)와 「대학 기초교양교육 개선을 위한 교과목 개발 연구보고서」(1981년 12월)로 제출되었다.

먼저 「개선을 위한 연구」는 교양 교육을 “전공 교육의 기초로서 또는 교육받은 일반 교양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자질을 기르기 위한 교육”으로 규정하고, 단순히 전공 이외의 학문에 접하도록 한다는 소극적 의미를 넘어 전공 학문을 더 깊이 공부하고, 폭넓은 지성을 함양하기 위해 여러 분야의 학문에 접할 필요가 있다며 전공 교육에 적

극적인 의미를 부여하였다. 그리고 종래의 교양 교과가 정책 과목(국민 윤리, 한국사, 체육, 교련), 도구 과목(국어, 외국어), 개론 과목의 3체제로 구성되었는데, 이 가운데 개론 과목의 경우 해당 전공 학문의 체제를 중시하고 그 학문의 일반적인 이론들을 소개하는 데 중점을 두어 전공 과목과 교양 과목 간의 성격 구분을 애매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하였다.

「개선을 위한 연구」는 교양 교육의 개선을 위해 교양 과목을 종래와 같이 인문 과학, 사회 과학, 자연 과학의 학문 영역별로 조직할 것이 아니라 현상이나 문제를 중심으로 한 ‘관심 영역’으로 조직되어야 하며, 그 관심 영역은 다음의 8가지로 나눌 것을 제안하였다.

- 영역 1: 한국사와 국민 윤리
- 영역 2: 국어와 작문
- 영역 3: 체육과 교련
- 영역 4: 외국어와 외국 문화
- 영역 5: 문학과 예술
- 영역 6: 역사와 사회
- 영역 7: 분석적 사고
- 영역 8: 과학

영역 1과 영역 3은 기존의 정책 과목으로, 영역 2, 4, 8은 도구 과목으로, 영역 5, 6, 7은 개론 과목들을 대체할 새로운 교과목들로 구성하였다. 영역 5의 문학과 예술은 문학과 예술의 기본 개념을 익히고 구체적인 작품에 접함으로써 비평적 안목과 함께 삶의 간접 체험 영역을 넓혀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과목들이었다(예를 들면, ‘현대 문학의 경향’, ‘음악의 이해’). 영역 6의 역사와 사회는 현대 사회에서 부각되는 주요 쟁점들의 역사적 배경과 현대적 의미를 역사적, 사회 과학적 맥락에서 설명하는 교과목들이었다(예를 들면, ‘근대화의 역사적 전개’, ‘여성과 사회’), 영역 7의 분석적 사고는 지식의 일반적 성격, 개인과 사회의 윤리학적 관계, 언어와 수학의 논리적 구조 등의 문제에 관한 철학적, 분석적 사고를 학습하기 위한 교과목들이었다(예를 들면, ‘언어와 논리’, ‘가치와 정당성’)

「개선을 위한 연구」는 교양 과목을 몇 개의 문제 영역으로 묶어 개발할 것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이후 서울대학교 교양 교육 개혁에서 하나의 전형이 되었다.

「대학 기초 교양교육 개선을 위한 교과목개발 연구보고서」(이하 「연구 보고서」)는 「개선을 위한 연구」에서 제안된 것을 보다 구체화한 보고서이다. 「연구 보고서」는 기존의 교양 교과목을 정책 과목, 도구 과목, 개론 과목으로 대별하고 각각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 정책 과목의 문제점: 국사, 국어 및 작문 등은 고등학교 교과 과정의 반복으로 학생들의 흥미를 상실하게 하고 있다. 국민 윤리는 i) 교과목 목표의 부적절성 내지는 그에 대한 인식 부족, ii) 교과목 이름이 주는 저항감 만연, iii) 교과목 내용의 잡다하고 복잡한 구성, iv) 강의 교수의 비전문성, v) 실제 강의 내용의 통일성 결여, vi) 이수해야 할 학생 수의 과다, vii) 시설 부족과 시간의 과다 등으로 지향하는바 목적과 어긋나는 역효과를 거두고 있다. 체육은 국민 체력 향상이라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보다는 시간을 채우는 형식적 교육에 흐르고 있으며 과다한 이수 기간의 부과로 다른 과목의 이수에 제약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 도구 과목의 문제점: 외국어와 수학 역시 고등학교 교육의 반복에 그치고 있으며 오히려 수준이 높은 학생의 의욕 상실, 과다한 학생 수로 인한 교수와 시설의 부족 등을 심각한 문제로 야기시키고 있다. 이로 인한 교육의 질적 저하가 문제이다.
- 개론 과목의 문제점: 교양 과목인지 전공과목인지 분간하기 어렵고, 학생들의 준비 수준과 관심의 방향에 부합되지 않음으로써 흥미와 의욕을 잃게 하고 있다. 또한 학생 수의 증가, 시설 부족으로 인해 분반이 불가피한데 교수별로 강의의 내용, 방향, 수준, 수업 방법, 평가 등의 측면에서 일률성을 결여하고 있다.

위와 같은 문제점 지적을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이 교양 교육에 대한 새로운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1. 한국사 과목은 전문적인 국사 과목과 역사학 과목으로 대치한다.
2. 윤리 과목은 이데올로기 비판, 국가 의식과 사회 윤리, 공산권 연구 등 한층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교양 또는 전공과목을 지정하여, 선택의 여지를 주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또한 과목 명칭의 재고와 새로운 다학문적 접근에 의한 개편이 시급하다.
3. 체육 과목: 이수 학점 수 축소, 각종 운동 기량을 개별적으로 습득, 향상시킬 수 있는 운동 실기 과목으로 그 운영 방식을 개편한다(실제로 1982년 1학기에 실시하였으나 2학기부터는 원래대로 환원).
4. 일반 국어 과목: 시험에 의한 이수 면제 또는 학점 인정 제도를 도입하거나 현재의 교재 및 교수 방법을 실용성 있게 개선할 것이 긴요하다.

5. 대학 출신자들의 「기능적 문맹」 현상을 극복하는 길로써 국어 작문 과목의 중요성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교재와 교수 방법의 근본적인 개선을 해야 한다.
6. 도구 과목(영어·제2 외국어·수학): 시험에 의한 이수 면제 또는 학점 인정 제도 도입, 교육 방법의 개선 등을 도모한다.
7. 개론·입문 과목: 「교양 교육 핵심 교과 과정」을 개발, 대체한다. 핵심 교과 과정은 I. 외국어와 외국 문화, II. 문학과 예술, III. 역사와 사회, IV. 분석적 비판적 사고, V. 과학과 인간 생활 등 5개 영역이다.

이 가운데 교양 과목의 전폭적인 성격 전환을 함축하는 교양 교육의 핵심 교과 과정은 「개선을 위한 연구」에서 제안한 ‘관심 영역’의 틀을 유지하면서 일부 영역의 명칭을 변경하고, 영역의 수도 8개에서 5개로 바꾼 것이었다.

1982년에는 「연구 보고서」의 계획대로 각 영역에서 하나씩 총 5개의 실험 과목들이 개설되었다. 실험 과목의 명칭은 핵심 영역 I의 외국어와 외국 문화는 ‘현대 미국의 사회와 문화’, 핵심 영역 II의 문학과 예술은 ‘한국 근대 문학의 이해’, 핵심 영역 III의 역사와 사회는 ‘전쟁과 평화’, 핵심 영역 IV의 분석적·비판적 사고는 ‘현대의 철학적 이해’, 핵심 영역 V의 과학과 인간 생활은 ‘현대 과학의 구조’였다. 1982년 12월에 작성된 「대학교양과정 개편연구」는 위의 5개 실험 과목의 운영 실태를 평가하고 새로 5개의 교과목을 개발하였다. 즉, 영역 I에서는 ‘영미 성장기의 문학’ 1과목을(앞의 ‘현대 미국의 사회와 문화’는 영어 I의 대체 과목이고, ‘영미성장기의 문학’은 영어 II의 대체 과목으로 이후 각각 1학과 2학기에 개설되었다), 영역 III에서는 ‘여성과 사회 I’, ‘여성과 사회 II’, ‘경제적 자유와 평등’ 등 3과목을, 영역 V에서는 ‘과학과 환경’ 1과목 등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1986년에는 영어 I, 영어 II를 영어로 통합하고 ‘영산문 강독’을 영어 대체 과목으로 새로 설치하였다.

실험 과목들은 한 강좌당 60명으로 인원 제한, 강의 조교(T.A)의 배치, 읽을거리 목록의 사전 배포, 상대 평가 등 그 운영에 있어서 다른 과목들과 달랐다. 또 실시 초기부터 비교적 인기가 높았는데, 수강 신청하는 날에는 수강 승인서를 배부하는 본부 수업과 앞에 이른 아침부터 수강 희망자들이 몰려들어 대부분 오전 9시경 제한 인원을 채울 정도였다.

## 제5절 자율화 진전과 기초 교양 교육 강화(1990~2006년)

### 1) 법정 교양 필수 과목 폐지와 영역별 교양 교과 과정 체제 시행

1989년 2월 문교부는 대학의 자율성 제고와 학생들의 다양한 학문적 욕구를 수용하기 위해, ‘교육법시행령’ 제119조 제4항의 법정 필수 과목 지정 규정을 삭제할 예정임을 통보하고 다음과 같은 방침을 알려 왔다.

1. 교련은 1990학년도부터 폐지.
2. 국민 윤리, 한국사, 체육 과목의 필수 과목 지정 여부는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결정.
3. 일반 교양 과목의 학점 배점 기준은 현행대로 전체 과목 학점의 30%를 유지.
4. 권장 사항: 교양 과목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교양과정운영위원회의 편성과 담당 교수의 격상, 학습 자료의 협동 개발.

법정 필수 과목이 사라짐에 따라 교과목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많아졌고, 이에 서울대학교는 새로운 교양 과목 개선 작업을 서두르게 되었다. 이는 문교부 방침 때문만이 아니라 그때까지 시행하던 교양 교과 과정의 여러 문제점 때문이기도 했다.

당시의 교양 교과 과정은 여전히 개론 과목을 위주로 하여 교양 과목으로서 적절한지가 계속 논란이 되었고, 학생들의 선택 폭도 그다지 넓지 않은 상태였다. 1989년부터는 1985년부터 적용해 오던 교과 과정을 바꾸어 새로운 교과 과정을 시행하고 있었는데, 이 역시 동일한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었다.

이에 서울대학교는 1989년에 교양 교육 과정을 다시 전면 개편하여 교육 과정의 내실화를 기하고, 특정 학문을 중심으로 하는 ‘개론 과목’에서 탈피하여 과목의 폭과 다양성을 넓히는 주제별 통합 과목의 개설을 목표로 하였다. 그리고 1989년 1월부터 교양 교육연구위원회를 중심으로 수차례의 회의를 열어 기본 골격을 확정하고, 1989년 10월에 ‘교양교육제도개선종합방안’(이하 ‘종합방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이 방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았다.

1. 교양 과목을 필수 과목, 인문 과학, 사회 과학, 자연 과학으로 분류하는 것을 지양하고, 제1 영역(국어와 작문), 제2 영역(외국어와 외국 문화), 제3 영역(문학과 예술), 제4 영역(역사와 철학), 제5 영역(사회와 이념), 제6 영역(자연의 이해), 제7 영역(기초과학), 제8 영역(체육 및 기타) 등 8개 영역으로 분류.
2. 각 영역별로 한 과목 이상을 이수.
3. 교양 과목 최저 이수 학점을 현행대로 대학별 졸업 소요 학점의 30% 이상으로 하되, 1학년에서 3학년 사이에 고르게 이수.
4. 1학년 각 학기 중에 전공과목을 6학점 이상 편성.
5. 각 단대별로 영역별 학점 배분, 필수 과목 지정 및 기타 이수 과정을 정하여 시행.
6. 일반 선택 교과목 중 공통 인정 교과목 제도를 폐지.

이 ‘종합 방안’은 학생들의 선택 폭을 넓혔다는 점, 인문·사회·자연과학대학 위주의 교양 교육에서 탈피하였다는 점, 그리고 전 대학이 참여한 지속적인 연구 검토 작업의 성과물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종합방안’은 1990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하였고, 1989학년도 이전 입학자도 본인의 선택에 따라 종전 과정 또는 개편된 교양 교과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90년의 교양 교육 구조 개편은 이수 규정의 많은 부분을 각 단과대학에 위임하였기 때문에 단과대학별 특성이 뚜렷이 부각되는 결과를 낳았다. 즉, 각 대학이 자체적인 교양 필수 과목 및 이수 규정을 정하여 시행하였는데, 가령 인문대학은 국어 작문, 영어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고, 제2 외국어 3학점 이상, 4영역에서 한국사 계열 과목 2학점, 역사 계열 3학점, 철학 계열 3학점 이상을 포함할 것을 규정하였다. 기타 각 대학이 자체적으로 규정한 8개 영역별로 최저 이수 학점 배분은 <표 3-3-6>과 같다.

1990년의 개편은 학생들의 다양한 지적 요구를 수용하여 선택의 폭을 늘렸다는 점, 교양 교육의 질적 고양과 자율성 확대를 꾀했다는 점에서 학내의 전반적인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몇 가지 문제점도 노출됐는데, 먼저 ‘종합방안’이 처음 실시된 1990년 1학기에 개설된 197개 과목 495개 강좌 중 무려 89개의 강좌가 수강 인원 기준(15명)에 미달하여 폐강된 점이다. 이러한 폐강 사태가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교양 과목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확립하지 못해 학점 취득에 용이한 과목에 수강 신청이 몰렸기 때문이었다.

또 새로 개편된 교양 과목 개선안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수강 인원이 초과된 교과목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것도 문제였다. 많게는 600여 명의 학생들이 모이는 인



〈표 3-3-6〉 1993학년도 대학별 영역별 교양 과목 최저 이수 학점 배분표

영역	대학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가정대학		간호대학	경영대학	공과대학	농과대학		미술대학	법과대학	사범대학		수의과대학	약학대학	음악대학	의치의(예)
					소비자아동	식영/의류				농경제	자연			교육/기타	자연/수학				
국어와 작문	15	3	3	3	3/3	3	3	3	3	3	3	3	6	3/3	3/3	3	3	3	3
외국어와 외국 문화		6	6	6	3/6	6	9	6	6	6	9	6	9/9	6/6	6	6	6	6	6
문학과 예술	20	3	3	3	3/3	3	3	3	6	3	6	6	3/3	3/3	3	3	6	3	
역사와 철학		3	2	6	2/3	5	3	2	5	2	6	6	3/3	3/3	3	3	6	2	
사회와 이념	6	12	3	9	3/3	9	9	3	6	3	6	9	2/5	2/2	3	3	6	3	
자연의 이해	3	6	3	3	0/0	6	3	0	3	0	3	3	3/3	0/0	6	0	3	0	
기초 과학	0	0	18	0	22/18	8	6	22	6	18	0	0	0/0	22/14	21	26	0	30	
체육 및기타	0	0	0	0	0/0	0	1	0	0	0	0	0	2/2	2/2	1	0	0	0	
선택	0	9	4	12	6/6	5	6	3	7	7	9	9	20/17	3/10	0	1	12	12	
학점 합계	44	42	42	42	42/42	45	43	42	42	42	42	45	45/45	44/43	46	45	42	59	

비고: 1. 영역에 배당된 학점 합계가 해당 대학의 교양 과목 최저 이수 학점에 미달된 경우에 부족한 학점은 1~8 영역 중에서 자유로 선택(자연계는 7영역 제외) 이수하여야 함.

2. 간호대학은 1992년에 분리·승격.

기 교양 과목들의 경우, 강의의 원활성과 강의실 수용 능력을 고려할 때 부득이 수강반을 분반하여 따로 개설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무엇보다 법정 교양 필수 과목을 폐지했는데도 교양 과목의 최저 이수 학점 내에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학점 수가 극히 적다는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어 사범대학의 경우 각 과별로 교양 필수 과목을 지정하였는데, 그 중엔 9개 과목 35학점을 지정한 곳도 있었다. 애초 8개 영역별 최저 이수 학점을 정해 놓은 것 자체가 선택의 폭을 제한하는 조처였고, 교양 이수 학점의 대부분을 교양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여 학생들에게 선택의 여지를 거의 주지 않고 있었다. 더구나 공과대학 등 일부 단과대학에서는 오히려 교양 과목 신청이 이전보다 획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1994학년도에 공과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1학기에 수강해야 할 19학점의 수강 과목이 이미 모두 정해져 있었다.

1991년의 「자체 평가 보고서」에서도 교양 과정에 대하여 지나친 전문화와 학과 중심주의를 지적하고, 1990년부터 시행된 교양 교육 개선안이 아직도 개선 여지가 많이 남

아 있다고 평가하였다. 구체적으로 ① 전공 학문을 벗어난 통합적 주제에 맞는 교과목을 제공한다는 기본 취지가 제대로 관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각 학과에 교과목을 제안하도록 하는 방식을 재고해야 한다는 점, ② 각 대학별 계열별 최저 이수 학점 배분표에서 보이듯이 교양 과정을 전공 과정의 기초 과정이라고 인식하는 틀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학점 배분을 단과대학에 맡기는 운영 방식을 재고해야 한다는 점, ③ 교양 교육을 교과목의 이수 방식을 벗어나 대학의 총체적인 생활과 문화 속으로 침투해 들어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또한 현행 교양 교과 과정은 각 단과대학과 학과가 개설한 교과목과 강좌들을 그대로 수습한 것에 불과하여, 대학 전체 차원에서의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조정이 행해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교양 교육을 위한 전문 교수의 도입이 필요하고, 교양 교육을 전담하는 상설 기구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있었다.

4년 단위로 교과 과정을 개편하던 서울대학교는 1993년 2월에 「1989 서울대학교 교과과정」을 개정한 「1993 서울대학교 교과과정」을 발간하여 1993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하였다. 이때의 개정은 1989년의 '종합방안'의 내용 중 미처 반영하지 못했던 내용을 수록하였고, 그 동안 학과별, 대학별, 전공별로 이루어졌던 교과 과정 개편을 종합한 것이었다.

## 2) 일반 교육(general education) 원칙 강조와 핵심 교양 과목 신설

1995년 4월에 작성된 「교양 교육의 개선방안연구」(이하 「개선방안연구」)는 1975년 교양과정부 폐지 이후 8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교양 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소정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이를 총체적으로 점검·개선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보다 직접적으로는 서울대학교가 대학원 중심 대학을 지향하며 학부제 등 교육 조직의 재편 작업을 계획하는 상황에서, 개별 단위를 넘어 대학 전체의 시각에서 학부 교육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개선방안연구」는 대학 교육에서 교양 과정의 의미를 단순히 시간상으로 전공 과정에 선행하여 이수해야 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통념을 지양하였다. 그러한 인식의 결과 교양 과정을 단순히 전공 과정의 준비 과정으로 생각하여 교수와 학생 모두 교양 과정을 소홀히 다루게 되었다고 보았다. 그 대신 교양 과정을 전공 과정과 대등한 지위를 가

진, 대학 교육의 독자적인 부분으로 볼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곧 대학 교육은 교양 과정과 전공 과정을 대등한 양대 지주(兩大支柱)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개선방안연구」는 대학의 교양 교육 정신의 핵심으로 일반 교육(general education)과 자유교육(liberal education) 원칙을 들었다. 자유 교육은 인류가 이루어 놓은 문화적 가치를 직업 수행과 같은 특정 목표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서 누릴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 교육이 특정한 정치 이념이나 사회사상, 윤리 의식을 고취하고 주입하는 목적에 종속되는 것을 부정한다. 「개선방안연구」는 지적 개방성을 위해 교양 교육에 있어 자유 교육 원칙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보다 비중을 두어야 하는 것은 교육 내용이 특정 분야에 치우침 없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일반 교육 원칙임을 강조하였다. 즉, 각 분야에서 요구하는 전문 지식의 양 자체가 많아지고 새로운 지식의 등장으로 기존 지식이 낡은 것으로 폐기 처분되는 속도가 빠른 상황에서, 지나치게 세분화되고 좁은 전문 분야의 지식을 전수하기 보다는 새로운 지식에 계속 접할 수 있는 바탕 역량을 키워 주는 방향으로 교육 내용이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개선방안연구」는 이상과 같은 기본 인식 아래 당시 교양 교육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교양 교육을 전담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취약하다. 둘째, 지나치게 잡다한 교과목이 나열되어 내실 있는 교양 강의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 1990년에 기초 과학 교과목이 설정되는 등 교양 교과목이라 할 수 없는 전공 기초 교과가 교양 교육 영역에 침투하였다. 셋째, 전공 교과의 수업 부담이 증가하면서 학점 취득이 용이한 교양 교과목을 선호하는 경향이 일반화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선방안연구」는 크게 ‘교양 교육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체제 확립’과 ‘교양 교육 교과 구조 개편’이라는 두 측면에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도적 지원 체제를 확립하는 방안의 핵심은 학사교육원을 설치하는 것이었다. 학사교육원은 종합화 이전 교양 교육만을 전담했던 교양과정부와 유사한 기구라 할 수 있는데, 종래의 교양과정부가 협의(狹義)의 교양 교육만을 담당하는 기관이었다면 이 학사교육원은 학사과정 교육 전체를 총괄하면서 교양 교육과 전공 교육을 유기적으로 연결 조정한다는 점이 달랐다. 그런데 학사교육원 설치에 대학 편제를 조정해야 하는 복잡한 사안이므로, 「개선방안연구」는 그 때까지는 단기적으로 교양교육위원회를 둘 것을 제안하였다. 그 외 ‘교양교육기금’ 설치와 교양 교과를 담당할 전임 교수 인력을 확보하

는 것이 주요 방안으로 구상되었다.

다음으로 교양 교육의 교과 구조 개편은 8개 영역으로 병렬적으로 구성된 기존 교양 과정 구조를 ‘학문의 기초’, ‘핵심 교양’, ‘일반 교양’ 등 세 층위 구조 바꿀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하버드대학의 ‘핵심 교양 교과목(Core Curriculum)’을 참조한 핵심 교양 과목은 각 학문 영역에 대한 적극적 체험을 가능케 하는 매우 밀도 있고 수준 높은 과목들로 구성할 것을 구상하였다. 그 밖에 전체 이수 학점 수를 축소할 것, 대형 강의는 S/U(합격/불합격) 제도를 도입할 것, ‘교양 특별 강좌’를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지적 욕구를 충족시킬 것, 학점 취득 난이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교양 과목에 상대 평가제를 도입할 것 등을 계획하였다.

1996년에 대학본부는 학부생 1,300명을 대상으로 교양 교육에 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런데 설문 조사를 통해 재차 확인된 것은 교양 교육이 부실하게 시행되고 있으며, 대학 구성원 모두가 교양 교육을 소홀히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15%가 교양 교육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다고 하였으며, 90%의 학생들이 수업 준비 없이 강의에 들어간다고 답하였다. 학생들은 선배들이 듣던 강의를 그대로 따라 듣는 경우가 많았으며, 학점을 채우기 위해 마지못해 교양 과목을 듣는 실정이었다. 이는 학생들의 불성실뿐만 아니라 일부 교수들의 수업에 대한 열의 부족, 대학본부의 비탄력적인 교과 운영 때문이기도 했다.

1997년 8월 28일, 학장회가 교양교육전문위원회의 설치를 비롯하여 교양 교육 제도의 개선 방안을 확정함으로써, 「개선방안연구」의 계획들을 본격적으로 현실로 구현되기 시작하였다. 교양교육전문위원회는 교양 교육의 목표 정립, 교양 교육 과정 및 강좌 개설의 원칙 수립, 교양 교과목 개설 조정 및 지원, 강의 평가 및 개선 방안 마련 등을 관장하는 역할을 부여받았다. 그리고 1999년의 「서울대학교 교양교육 제도 개선 연구」, 2001년 2월의 「서울대학교 교양교육 제도 개선(안)」, 2002년 1월의 「기초교육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등 교양 교육 제도 개선을 위한 일련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 내용은 주로 「개선방안연구」의 틀을 유지하면서 그것을 보다 구체화하고 상황에 맞게 재조정하는 정도였다.

새로운 기초 교양 교육 제도는 200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 구조와 운영 원칙은 아래와 같다.

## 1. 기초 교육 과정 구조

① 학문의 기초: 대학에서 학문 수행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필수적이며 기본적인 내용의 교육을 위하여 다음 3개 분야의 교과목들로 구성한다. 국어와 대학 영어 또는 고급 영어는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며, 이 영역에서 그 외의 교과목은 대학별로 최소 이수 학점을 정하도록 한다.

- 국어
- 외국어 및 고전어
- 기초 과학

② 핵심 교양: 현대 사회에서 지식인으로서 공유해야 할 지식의 기본적 틀을 다양한 관점에서 교육하기 위해 다음의 4개 분야의 포괄적이고 연계적인 주제를 다루는 교과목들로 구성한다. 이 영역에서는 9학점 이상을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이는 최소한 3개 분야에서 선택되어야 한다.

- 문학과 예술
- 역사와 철학
- 사회와 이념
- 자연의 이해

③ 일반 교양: 개론 과목 등 강의식으로 수행될 수 있는 성격의 과목, 대단위로 운영되어도 충분한 교육 효과가 기대될 수 있는 성격의 과목, 과목의 성격상 '학문의 기초'나 '핵심 교양'에 속하지 않는 과목들로 구성한다. 다양한 교양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하며, 일반 교양 과목도 5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 문학과 예술
- 역사와 철학
- 사회와 이념
- 자연의 이해
- 체육 및 기타
- 기초 교육 특별 프로그램

## 2. 기초 교육 운영 원칙

① 학문의 기초

- 국어, 대학 영어(또는 고급영어)는 공통 필수 과목으로 정한다.
- 학문의 기초에 속한 그 외 교과목의 이수 규정은 대학별로 정한다.
- 주요 교과에 대하여는 수준별, 계열별 교육을 권장한다.

- 필수 교과목의 학점은 대학별로 통합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 각 해당 영역의 특성에 알맞게 운영한다.

## ② 핵심 교양

- 핵심 교양 교과목은 전임 교수가 담당한다. 대형 강좌의 경우에는 200명까지 수용할 수 있으나 토론이나 실습을 하는 경우에는 분반을 원칙으로 한다. 토론이나 실습을 위한 분반 강좌에는 시간 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 핵심 교양 교과목은 매 학기 개설함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 교과목이 여러 강좌로 개설될 경우에는 강의 계획서, 과제물, 시험, 평가 등에서 서로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
- 강좌당 60명 이내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과목당 최대 4개 강좌까지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최대 수강 인원이 200명을 초과할 수 없다.
- 모든 강의에 글쓰기 과제물을 부여하고, 과제물 지도를 담당할 조교를 배정한다.
- 핵심 교양 교과목은 상세한 강의 평가(강의 진행, 과제물 부과, 강의 목표 달성도 등) 및 수강 소감 조사를 시행하며, 이를 매 2년마다 검토하여 교과목 폐지 여부에 반영한다.
- 핵심 교양 교과목의 신설 요청 시에는 핵심 교양 교육 과정의 취지에 부합되는지를 판별할 수 있는 자료로서 교과목 개요, 강의 계획서, 교재 및 독서 목록 등을 기초교육위원회에 교과목 신설 1년 전에 제출하도록 한다.

## ③ 일반 교양

- 3년 간 개설되지 않은 교과목은 폐지한다.
- 서울대 내에 교장(敎場), 교구(敎具)가 구비되지 않은 과목 및 교과목 이수에 학생 개인의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교과목은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대학의 교양 교과목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거나 몇 차례의 특강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교과목은 폐지한다.
- 교육 내용상 전공과목으로 지정해야 할 교과목은 전공과목으로 이전한다.
-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거나 비슷한 제목의 과목이 나열되어 과목 간의 차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교과목은 통합한다.
- 평점 평가 방식으로 수강생의 성취도를 평가하는 것이 부적절한 교과목은 S/U의 평가 방식을 권장한다.

서울대학교가 새로운 기초 교양 교육 제도를 마련하면서 무엇보다 중점을 둔 부분은 핵심 교양 과정의 신설이었다. 핵심 교양 과목은 위의 운영 원칙에서도 알 수 있듯이 충실한 수업 운영을 위한 장치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 중 핵심적인 두 가지는 글쓰기 담당 조교 배치와 매 2년마다 실시하는 교과목 평가 작업이다.

글쓰기 과제물 지도는 2003년 2학기부터 국내 처음으로 도입하였는데, 반드시 2회 이상의 글쓰기 과제물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매 학기 영역별로 우수한 보고서를 선정, 상금과 표창장을 수여하여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고취하고 있다. 담당 조교에게는 수업료 면제와 매월 60만원의 연구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매 학기 우수 조교를 선정하여 포상한다. 글쓰기 지도는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교수학습개발센터(CTL: Center for Teaching & Learning)가 실시한 '2003학년도 2학기 핵심 교양 과목 수업 담당 조수(T.A)의 활동에 관한 수강생 설문 조사' 결과 조사 학생 중 84.9%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교과목 평가는 핵심 교양 과목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매 2년마다 아래와 같은 요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미비한 분야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고하고 학생들의 수용에 부응하지 못하는 과목은 폐지하고, 각 영역별로 2개 강좌씩 우수 강의를 선정하여 포상한다.

#### 〈평가요소〉

1. 교과목 개발 취지 및 목적
2. 교재, 부교재, 참고자료의 질적 수준
3. 강의계획서와 실제 강의 내용의 부합성
4. 성적부여 방법 및 결과
5. 강의보조인력의 수강생 지도 내용
6. 학생들의 강의수강소감 조사 내용
7. 개설지침 준수 여부
8. 학기별 수강생 수
9. 발전성 및 개선 노력
10. 기타 영역별 특성 등

실제 2004년, 처음으로 핵심 교양의 60개 교과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는 2단계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1단계 평가는 예비평가위원회가 위의 평가 요소에 따라 세밀하게 교과목을 평가하였는데, 예비평가위원회는 핵심 교양 4개 분야별로 위촉된 17명의 교수로 구성하였다. 2단계 평가는 기초교육원장과 7명의 기초교육원 주임교수로 구성된 교양교과목 평가위원회가 담당하였는데, 주로 우수 교과목이나 폐강 및 개설 제한 교과목을 중심으로 종합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 결과는 공문 형식으로 담당 교수에

게 전달되었으며, 일부 교과목은 평가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교과목명을 변경하였다. 2004년의 평가는 「교양 교과목 편성구조 개선 및 교과목 평가에 대한 연구」란 책자로 정리되었다.

핵심 교양 과정은 서울대생 모두가 필수적이며 핵심적인 지식과 능력을 공통적으로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에, 각 단과대학은 아래 <표 3-3-7>과 같이 9~12점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교과목 개발도 계속되어 2002학년도 1학기 60개로 시작한 교과목 수가 2006학년도 1학기 현재에는 109개로 늘어났다.

이렇듯 최근 핵심 교양 교과는 양적으로 급성장하면서 본교 기초 교양 교육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음이 두드러진다. 그런데 핵심 교양 교과는 보다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첫째, 핵심 교양과 일반 교양의 구분이 여

<표 3-3-7> 단과대학별 기초 교양 교육 과정 이수 규정

단과대학	학문의 기초	핵심 교양	선택	계
인문대학	15	9	12	36
사회과학대학	6	9	21	36
경영대학	15	12	9	36
농경제사회학부	6	9	21	36
미술대학	9	12	15	36
법과대학	12	12	12	36
사범대학(인문 사회계)	12	12	12	36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9	12	15	36
생활과학대학(인문계)	9	15	12	36
음악대학	6	9	21	36
자연과학부	24	12	7	43
의예과	24	9	8	41
치의예과	24	9	9	42
수의예과	24	9	6	39
간호대학	15	9	12	36
공과대학(건축과 제외)	39	9	6	54
건축학과 건축학전공	28	9	0	37
농업생명과학대학 자연계	18	9	9	36
사범대학(자연계)	21	9	7	37
생활과학대학(자연계)	18	9	9	36
약학대학	21	9	7	37



전히 모호하며, 과목의 성격상 핵심교양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문스러운 과목이 많다는 지적이 있다. 둘째, 충실한 글쓰기 첨삭 지도 등 핵심 교양 교과목을 본래의 개설 취지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수강 인원을 더욱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셋째, 학생들에게 일정 학점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규정했음에도 강좌 종류와 수가 너무 부족하다는 불만이 많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떤 성격의 교육이 대학 교육에서 중핵을 이루어야 하느냐에 대한 공통된 인식 기반을 정립하고, 이에 기초하여 기존의 과목들을 핵심 교양의 취지에 맞는 지 검토하여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 학생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수강 인원을 줄이기 위해서는 강좌 수를 더욱 늘려야 한다. 하지만 교과목 재정비는 현실적으로 학과 간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고, 강좌 수 증설은 핵심 교양 과목의 담당 교수는 전임교수로 제한하고 있어 이 역시 실행에 제한이 있다.

핵심 교양 과목을 개설한 지 4년이 지난 지금, 교수와 학생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어 핵심 교양 과목의 양과 질을 모두 제고할 방안이 절실하다.

### 3) 기초교육원 설립과 기초 교양 교육 강화

#### (1) 기초교육원과 교수학습개발센터 설립

서울대학교는 2002학년도 모집 단위 광역화를 전면 실시하면서 새로운 기초 교육 과정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준비해 왔으며, 그 일환으로 2002학년도부터 앞서 언급한 대로 새로 개편한 기초 교양 교육 과정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기초 교양 교육을 지속적으로 연구 계획하고 전체적인 시각에서 이를 관리하는 전담 부서 없이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의 관련 학과(부)가 알아서 이를 처리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기초 교양 수업이 해당 학과(부)의 전공 수업보다 뒷전으로 밀리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기초 교양 교육을 지속적으로 연구 계획하고 전체적인 시각에서 관리하는 전담 부서의 존재가 절실했다. 이는 곧 앞서 「교양 교육의 개선방안연구」가 제안한 학사교육원 설치를 의미하였다.

「기초 교육 개선 및 전담부서 설치 연구(2002.3.1~2001.4.15)」는 기초 교육의 전담

〈표 3-3-8〉 2006학년도 1학기 교양 과정 종류별 교과목 수 및 강좌 수와 비율

교양 과정의 종류	교과목 수(비율)	강좌 수(비율)
학문의 기초	120(24.3%)	516(44%)
핵심 교양	109(22.1%)	94(8%)
일반 교양	264(53.6%)	562(48%)
전체	493(100%)	1,172(100%)

출전: 기초교육원, 2006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12~14쪽.

기구로 기초교육원 설립의 필요성을 밝히고 구체적인 기초교육원 운영 지침 및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2002년 6월, 교무처 소관으로 기초 교육을 전담할 부속 시설로 기초교육원을 신설하였다. 동시에 학사과정의 기초 교양 교육의 방침을 심의하기 위해 기초교육위원회도 새로 설치하였다. 기초교육원장은 교무처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교무부처장이 겸임하였고, 기초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부위원장은 교무부처장 겸 기초교육원장이 맡았다.

「기초교육원 강화 방안 연구(2004.3.1~2004.6.15)」는 기초교육원으로 하여금 기초 교양 교육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그 기능을 주도적으로 수행케 하기 위해, 기초교육원의 학내 위상을 더 높이고 조직도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 원장의 업무 수행을 보좌하기 위해 부원장을 둘 것과, 주임 교수도 기존의 8명에서 10명 내외로 증원하여 교과목 개설, 강사 위촉 및 교양 교과 과정의 운영 및 조정에 대해 원장을 보좌할 것을 제안하였다.

「기초교육원 강화 방안 연구」의 제안은 2004년 8월에 학칙 개정을 통해 거의 그대로 실현되었다. 이때 기초교육원은 교무처 소관 부속 시설에서 독립 기구로 전화하였으며, 원장은 학장급으로 격상되었다. 또, 입학 전 교육 및 수탁 교육 등의 교육 기능을 부여 받았고, 전임 대우 강사를 두어 교육 및 학사 지도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기초교육원은 이렇듯 개원 2년 만에 그 기능이 대폭 강화되었다. 기초교육원의 위상 변화에 따라 기초교육위원회도 위원장을 부총장으로 승격하고, 기초교육원장이 부위원장을 맡았다.

2006년 현재 기초교육원의 주요 업무는 아래와 같다.

#### 기초교육원의 주요 업무

- 기초 교육에 대한 장단기 발전 계획 수립
- 교양 교과 과정 개발, 편성 및 조정

- 입학 전 교육
  - TEPS, 교양 수학 및 물리 성취도 측정 시험
  - 대학 국어를 위한 한자 교재 배부
  - VOD 강좌 운영
  - 출석 수업
- 기초 교육 과정의 운영 및 학사 관리
  - 개설 교과목 관리
  - 수업 시간 편성 및 운영
  - 강의실 배정
  - 성적 평가
- 교양 교과목 강의 평가 및 교과목 평가 사업
- 기초 교육 교재 및 각종 자료 발간 사업
- 포상 사업
  - 우수 교양 강의
  - 학사과정생을 위한 우수 과제 보고서
  - 대학원생을 위한 우수 강의 조교 활동
- 전공 진입 전 학사 지도 및 상담
- 기초 교육을 위한 연구 및 학술 활동
- 기초 과정생 학습 지원 활동
- 교양 과목 대학원생 강의 조교 지원 사업
- 교과 및 비교과 특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신입생 세미나, 자아 개발 교과목, 옴니버스식 강의 교과목, 관악 초청 강좌 등
- 위탁(수탁) 교육
- 산하 센터 운영
- 기초 교육 예산 운영
- 위원회 운영: 기초교육위원회, 운영위원회, 학문 분야별 소위원회

현재 기초교육원은 학사 과정의 기초 교양 교육을 위한 제반 사항을 기획·심의하고 이를 집행하면서, 최근 대학 당국이 추진하는 일련의 기초 교양 교육 강화 정책의 핵심 기구로 기능하고 있다.

한편, 2001년 3월에 대학에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을 연구·개발하여 대학 교육의 내실화에 기여하고자 교수학습개발센터가 설립되었다. 교수학습개발센터는 교수들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교수법과 교육 매체 활동에 관한 강연회 및 워크숍을 개최하고, 학

생들의 자율적인 학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교수학습개발센터는 교육지원부, 학습지원부, 이러닝(e-learning)지원부, 글쓰기 교실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지원부는 서울대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강의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교수, 강사,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교수법, 교육 매체 활용에 관한 강연회와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으며, 학습지원부는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자율적인 학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교과 과정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다양한 학습 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닝지원부는 면대면 수업을 보조하기 위한 이러닝 콘텐츠를 기획·개발하고 있으며, VOD형 콘텐츠 및 멀티미디어형 수업 자료 제작을 지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글쓰기 교실은 학생들의 학술적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리포트 상담, 리포트 작성법 코스워크, 학위 논문 작성법 워크숍 등 다양한 글쓰기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글쓰기에 관한 기초 연구, 글쓰기 교재 및 강좌 개발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글쓰기 교실은 이메일 상담과 방문 상담 등 여러 방식 상담을 통해 본 교 학생들의 글쓰기 능력 향상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2) 수도권대학 특성화 지원사업과 기초교육 강화 프로그램

2004년 교육부는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NURI)’에 대응해 수도권 대학들을 대상으로 특성화 계획 및 실적이 우수한 대학을 선별 지원하는 ‘수도권대학 특성화 지원 사업’을 시행하였다. 서울대학교는 ‘창조적 지식인 육성을 위한 기초교육 강화’라는 제목으로 이 사업에 신청하였는데, 우수대학에 선정되어 2008년까지 사업비를 지원 받게 되었다. 이로써 서울대학교는 기초교육의 혁신과 강화를 위해 수년전부터 실시해 온 각종 사업들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기초교육원과 교수학습개발센터가 중심이 되어 각종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시설 및 기자재 개선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서울대학교의 교양 과목 프로그램에서 특징적인 변화로는 글쓰기·말하기 교육과 외국어 교육의 강화, 그리고 새롭게 개발한 특별 교육과정들을 수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3-3-2 기초교육원과 교수학습개발센터가 함께 입주해 있는 61동 전경

### ① 글쓰기와 말하기 교육

서울대학교는 2001학년도부터 기존의 '국어 작문' (3학점 3시간) 과목을 '대학 국어' 로 변경하고 학점 구조도 3학점 4시간으로 바꾸었다. 이는 교양 강의를 대상으로 한 강의 평가에서 국어 작문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은 데다, 지식 위주의 기존 국어 작문의 수업 방식에서 탈피하여 토론과 작문 등 실습 수업을 강조한 새로운 형태의 수업을 개발하기 위해서였다. 수업 방식은 4시간 가운데 2시간은 기존 방식대로 이론 강의를 듣고, 나머지 2시간은 분반하여 작문과 토론 수업을 진행한다.

2004학년도부터는 인터넷 매체 등의 발달로 대학생들의 글쓰기 능력이 매우 부실하다는 의견을 수용하여, 대학 국어보다 한 단계 높은 글쓰기 과목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글쓰기 과목은 '인문학 글쓰기', '사회과학 글쓰기', '과학과 기술 글쓰기' 등의 종류로 나누어, 학문의 기초 영역에 3학점으로 개설되었다. 글쓰기 과목은 대학 국어 이수자에게만 수강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학술적 주제에 관한 소논문을 쓰는 과정을 통해 본격적인 학술적 글쓰기를 위한 기본 실력을 닦게 하는 것이 목적으로 30명 이내의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다. 기초교육원은 글쓰기 과목 운영을 위해 10여 명의 전임 대우 강사를 채용하여 대학 국어와 글쓰기 과목을 담당하게 하였다. 글쓰기 과목은 단과 대학별로 선택 과목 또는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2006년 현재 공과대학이 과학과 기술 글쓰기를 필수로, 약학대학과 생활과학대학 소비자아동학부가 선택적 필수로 지정하고 있다.

한편 2004학년도 2학기부터 현장(실무) 중심과 이론 중심의 말하기 교과목 4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수업은 실제 커뮤니케이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말하기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자기소개, 소집단 프리젠테이션, 아카데미 토론, 대중 연설 등 다양한 실습을 통해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목적이다. 일반 교양 영역에 3학점으로 개설되어 있으며, 약학대학이 선택적 필수로 지정하였다. 말하기 과목은 현재 수강 신청 개시 후 몇 초 안에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있다.

### ② 외국어 교육

서울대학교는 국제화시대에 발맞추어 2000년 1학기부터 새롭게 대학영어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대학영어는 이전의 교양영어가 독해와 문법 위주로 되어 있던 것에서 탈피하여, 말하기·듣기·쓰기·읽기 능력을 모두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 교양영어가 학생들의 영어 실력에 상관없이 모두 한 반에서 하나의 교재로 진

행되었던 것에 비해, 텡스(TEPS)나 토폴(TOEFL)을 기준으로 수준에 따라 기초 영어·대학 영어·고급 영어로 나누어 진행한다.

현재 졸업을 위해서는 대학 영어나 고급 영어 가운데 3학점을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데, 텡스나 토폴 점수가 일정 기준점 이하인 학생은 대학 영어나 고급 영어를 수강할 수 없다. 대신 이들은 기초 영어를 들을 수 있는데 여기서 S(합격)를 받으면 텡스 점수 없이도 대학 영어를 들을 수 있다. 또 기초 영어와 달리 대학 영어와 고급 영어는 멀티미디어 영어 학습실과 영어 글쓰기 교실을 학기당 일정 횟수 이상 방문하는 LAB 수업을 의무화하고 있다.

각 강좌의 수강 자격은 처음엔 기초영어 텡스 500점 이하, 대학 영어 500~700점, 고급 영어 701점 이상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2006학년도 신입생부터 이를 높여 대학 영어는 501점에서 551점 이상으로, 고급 영어는 751점 이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간호대학, 음악대학, 미술대학, 체육교육과는 기존의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대학 영어 수업을 통해 학부생들의 회화 및 청취 능력이 현저하게 향상되었다는 평가가 많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의 불성실한 태도와 함께 통일된 커리큘럼의 부재, 충실하지 못한 LAB 수업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 되고 있다. 반면 충실한 영어 교육을 하기에는 현재 3학점 이상인 의무 이수 학점이 너무 적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다.

서울대학교는 국제 관계 및 교류의 다변화를 도모하고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와 학문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영어 외에 중국어·프랑스어·독일어·러시아어·스페인어 등 서울대학교에 학과 전공이 설치되어 있는 외국어는 물론 히랍어·라틴어·이태리어·일본어·아랍어·말레이인도네시아어·힌디어·스와질리어 등 특수 외국어 교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 ③ 특별 교육과정

특별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학문 활동과 능력 개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최근 새롭게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비교과인 관악초청 강좌와 교과인 신입생 세미나, 옴니버스 식 강좌, 사회봉사 과목이 대표적이다.

관악초청 강좌는 매월 2회에 걸쳐 학자, 기업가, 외교관, 예술가, 시민사회운동가, 정부지도자 등 국내외 저명인사들을 초청하여 최근의 학문적 흐름, 사회적 변화, 국제적 쟁점에 관한 발표를 듣고 토론하는 자리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교양을 갖추어, 선도적 지성인의 교양을 개발하고 전공 분야에도 총체적이고 개방

적인 시각을 갖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06학년도 1학기까지 진행된 강좌의 현황은 <표 3-3-9>와 같다.

신입생 세미나는 교수 1인당 15명 내외의 학생을 배정하여, 전공분야와 대학생활 등에 대한 활발한 교류를 통해 신입생의 대학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또 학생의 전공 및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 2005학년도 1학기에 60개 강좌, 2학기에 55개 강좌, 2006학년도 1학기에 58개 강좌가 개설되었다. 과목당 1학점에, 학점 부여는 S/U(합격/불합격)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2005학년도 1학기를 마친 후 이수자와 미이수자의 학업성취결과(평균평군)를 비교한 결과 이수자가 미이수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3-3-9> 관악초청 강좌 현황

회차	일자	강사(강의당시직책)	주제
1	2004. 9. 16	황우석(서울대학교 석좌교수)	생명복제기술의 현재와 미래
2	2004. 9. 23	송기호(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중국의 한국 고대사 빼앗기
3	2004. 10. 7	Robert B. Laughlin(KAIST총장)	The Emergent Age
4	2004. 10. 21	이인호(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사회주의에 대한 새로운 성찰
5	2004. 11. 4	박용성(대한상공회의회장)	우리나라 기업의 현재와 미래
6	2004. 11. 18	Christopher R. Hill(주한미대사)	미국대선이후의 한미관계에 대해
7	2005. 3. 17	진대제(정통부장관)	IT839와 U-Korea
8	2005. 3. 24	김영란(대법관)	법의 이념과 소수자 보호
9	2005. 3. 31	이준구(국제 10021클럽 총재)	건강과 행복 가치 창조의 원리
10	2005. 4. 14	이문열(소설가)	변경이나 주변이나
11	2005. 5. 12	이이화(재야사학자)	과거사 청산의 역사적 의미
12	2005. 5. 26	김기덕(영화감독)	한국영화계와 세계영화계
13	2005. 9. 29	차인석(명예교수)	혁신자유주의와 사회주의
14	2005. 10. 13	이인화(소설가)	한국형 온라인 게임스토리
15	2005. 11. 3	문국현(기업가)	21세기 메가트렌드와 우리의 과제
16	2005. 11. 17	이어령(평론가)	한국문화의 소프트파워
17	2005. 11. 24	고은(시인)	시는 어디에 있는가?
18	2006. 3. 30	손석희(성신여대 교수, 아나운서)	방송토론문화 어떻게 볼 것인가?
19	2006. 4. 13	이용수(세종대학교 교수, KBS축구해설위원)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 경험과 2006년 독일월드컵 전망
20	2006. 4. 27	반기문(외교통상부 장관)	우리외교가 나아갈 길
21	2006. 5. 11	안숙선(국악인)	안숙선 명창의 판소리 이야기
22	2006. 5. 25	조정래(소설가)	문학과 역사

옴니버스식 강좌(모듬강좌)는 세분화된 전공과목 위주의 강의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폭넓은 사고력과 판단력을 기를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특정 주제에 대한 다학문적 접근을 특징으로 하는 이 강의는, 설정된 주제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집단적으로 강의를 진행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3학점으로 주당 3시간씩 강의를 진행된다. 2005학년도 2학기에는 ‘다산 정약용’ 이, 2006학년도 2학기에는 ‘엘니뇨: 세계를 바꾼 기후 현상’ 이 개설되었다.

사회봉사 과목은 대학교육이 캠퍼스 중심 교육에서 탈피하여 사회구조 개선 교육 등의 차원으로 확대·재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개설되었다. 교과목은 사회봉사 1·2·3 세 가지 형태인데, 사회봉사 1을 이수해야 사회봉사 2를 이수할 수 있으며, 사회봉사 1·2를 우수하게 이수한 학생에 한해 해외봉사활동 과목인 사회봉사3을 이수하게 할 예정이다. 학점은 1학점으로 2006학년도 1학기에 처음 개설된 사회봉사1의 경우 기본 교육 3시간 이상, 봉사시간 26시간 이상, 기말평가회 3시간 이상이였다.

이상의 특별 교양과정들은 아직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는 만큼, 앞으로의 운영 여하에 따라 그 정착 여부가 판가름 날 가능성이 높다.

#### 4) 전공 선택의 기회 확대와 학사 관리 엄정화 방안

##### (1) 전공 선택의 기회 확대

최근 서울대학교는 학생이 소질과 적성에 따라 다양한 분야를 선택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전공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복수 전공, 부전공, 연합 전공, 전과(부) 등의 제도를 확대 시행하였다. 이는 어느 교육부 관료의 말처럼 “공급자 중심, 학과 중심이었던 대학 교육을 탈피해 수혜자 입장에서 다양한 전공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 제도들은 학부제, 모집 단위 광역화 등의 교육 단위 개편에 수반하여, 학생들이 인기 학과에 집중되는 현상, 그로 인해 기초 학문이 부실화할 우려 등의 문제를 완화시키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다. 즉, 전공 선택의 기회를 확대하면 취업에 유리한 학과뿐만 아니라 평소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도 전공으로 선택하리라는 기대였다. 참고로 서울대학교의 졸업이수학점은 1996학년도 입학생부터 140점에서 130점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 ① 복수 전공

지금까지 학생들은 다양한 학문을 접해 보지 않은 채 하나의 전공을 택하고, 그것이 적성에 맞지 않을 경우 편입이나 전과 등 힘든 과정을 거쳐야 했다. 복수 전공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전공을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러한 단일 전공의 한계를 극복하고 졸업 후 진로 선택 시 선택의 폭을 넓히는 효과도 있었다. 서울대학교는 1997년 7월에 ‘서울대학교복수전공이수규정’을 마련하고, 1998년 1학기부터 이를 시행하였다. 단, 1996학년도 입학생은 단과대학 내에서만 가능하였고, 1997학년도 이후 입학생부터 단과대학 간에 복수 전공이 가능하였다.

그런데 막상 복수 전공제를 시행하자 시행 초기 희망자가 학년별 정원의 10%를 밑돌 뿐만 아니라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이는 복수 전공에 대한 안내가 부실했으 뿐만 아니라, 전공 시간표가 겹치는 경우가 많고, 학기당 취득 학점을 제한하고 있어서 복수 전공을 할 경우 졸업이 1,2년 늦어지는 등 현실적 제약이 많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복수 전공 제도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은 여전히 높아서 2003학년도와 2004학년도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 각각 41.6%, 43.6%가 복수 전공을 희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복수 전공을 쉽게 할 수 있는 수업 환경 개선과 공동 교과목 신설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2004년 5월에 학사과는 학생들의 복수 전공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대학교복수전공이수규정’을 개정하였다. 2004년 2학기부터 복수 전공 학과(부)의 교과 과정에서 전공 교과목으로 인정하는 경우(단과대학 내의 공통 교과목 포함)에는 9학점까지, 소속 전공 학과(부)와 복수 전공 학과(부)의 교과 과정에서 공통으로 인정하는 타 학과(부) 교과목(단과대학 내의 공통 교과목 포함)은 3학점까지 중복 인정하도록 했다. 또 학생들이 취업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05년 2월 졸업생부터 졸업 증명서와 성적 증명서에서 주전공과 복수 전공의 구별이 없도록 하였다.

그러나 규정을 개정한 뒤에도 학생들의 지원율은 크게 변화가 없었다. 현실적 제약이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공과대학의 경우 실제 공동으로 인정하는 교과목이 하나도 없는 등 공동 인정 교과목을 결정, 합의하려는 시도가 없었다. 또 공동으로 인정하는 교과목 체제를 합의 정리하더라도 이는 학문적 인접성을 바탕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같은 단과대학 내 복수 전공 활성화 정도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것도 문제이다.

복수 전공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다. “졸업 이수 학점이 130점으로 하향된 상태에서 여러 개의 학문을 깊이 있게 학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

리다”, “학과와 단과대학 간 장벽이 무너져 결국 전체 서울대 입시 경쟁률만 높아질 것이다”, “취업에 유리한 특정 학과를 복수 전공함으로써 취업의 수단으로 이용할 경우가 많이 발생할 것이다”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대학신문』(2006년 3월 13일자)의 설문 조사 결과, 학생들이 복수 전공을 이수하는 이유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이 “취업에 도움이 되므로” 또는 “전공과 연계되므로” 보다 “학문적 흥미(44.3%)”였듯이, 앞으로 복수 전공제는 학업의 자율성 확대와 세분화된 학과와 이로 인한 학문 간의 교류 협력 부족 등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06년 현재 복수 전공은 소속 학과의 졸업에 필요한 최소 학점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해야 지원이 가능하며, 부전공의 경우 입학 후 총 33학점 이상을 이수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단, 사범대학 학생이 복수 전공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전공 학점을 30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또, 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수의과대학, 간호대학 소속 전공과 자연과학대학 의예과, 치의예과, 수의예과 전공은 복수 전공과 부전공으로 택할 수 없고(법과대학은 부전공만 가능), 사범대학 소속 학과의 경우 타 단과대학생은 이를 복수 전공으로 택할 수 없으며 부전공으로만 선택이 가능하다. 예능계 대학의 전공은 소속 대학 학생만이 부전공으로 택할 수 있다.

## ② 연합 전공

연합 전공은 경직된 전공의 영역을 넘어 새로운 분야를 추구하고자 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고 학제적 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2개 이상의 전공 학문이 연합하여 새로운 전공 학문을 창출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모집 단위 광역화에 따라 수요자인 학생들에게 다양한 전공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존의 학문 영역을 넘어 국가와 사회가 요구하는 학문의 재편을 가능케 함으로써 대학 교육 제도에 자극제 역할을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1999년에 있었던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에서 “둘 이상의 학과, 둘 이상의 학부 또는 학과와 학부가 연계하여 제공하는 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서울대학교는 2001년 1월에 연합 전공 제도의 도입을 결정하고, 2002학년도 1학기에 처음 이를 시행하였다. 이때 처음 실시하는 만큼 그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복수 전공 형태로 실시돼 학생이 자신의 전공 외에 하나의 연합 전공을 더 선택하는 형태를 취하였다. 또 4학기 이상 6학기 이하 교과 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신청할 수 있으나,

〈표 3-3-10〉 복수 전공 학생 수 현황(1998~2005년)

(단위: 명)

대학	연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인문대학		11	29	39	41	65	47	43	41
사회과학대학		14	46	80	91	105	106	104	182
자연과학대학		24	36	21	45	43	36	43	36
경영대학		-	36	90	140	117	119	80	82
공과대학		14	11	23	50	44	33	17	16
농업생명과학대학		4	2	2	2	5	2	3	4
미술대학		12	4	13	14	14	15	4	9
사범대학		4	11	10	16	36	45	41	50
생활과학대학		2	1	1	2	2	2	4	6
음악대학		-	-	-	-	-	-	1	-
계		85	176	279	401	431	405	340	426

출전: 교무처 제공자료

연합 전공 참여 학과 소속 학생들만 지원 가능하였다. 연합 전공 이수자는 연합 전공과목에서 최소 39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했다. 시행 첫해인 2002학년도에는 〈표 3-3-11〉과 같이 네 개의 전공에서 총 163명을 모집하였다. 애초 정치·경제·철학전공(PPE; Philosophy, Politics & Economics), 한국학 전공, 도시학 전공, 생명학 전공, 기술 경영 전공 등 5개 전공을 개설하기로 하였으나, 준비 과정의 부족으로 도시학 전공과 PPE는 추후 신설하기로 하고 정보 문화학 전공을 추가하였다.

그림 3-3-3 2006년 대  
형강의실 수업 풍경

〈표 3-3-11〉 2002학년도 연합 전공 과정 현황

전공명	모집 정원	주관 대학(학과)	참여 학과
한국학	35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인문대: 국어국문학과, 국사학과, 고고미술사학과, 철학과, 종교학과 사회대: 정치학과, 외교학과, 인류학과, 지리학과, 경제학부, 사회학과 공대: 건축학과 사대: 국어교육과, 국민윤리교육과, 사회교육과 생활대: 식품영양학과, 의류학과 음대: 국악과 미대: 동양화과
정보 문화학	28	사회과학대학 (언론정보학과)	공대: 전기공학부, 컴퓨터공학부 사회대: 언론정보학과, 사회학과, 지리학과, 경제학부 경영대: 경영학과 법대: 법학부 인문대: 전학과 사범대: 교육학과 음대: 작곡과 미대: 디자인학부
생물 공학	50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자연대, 공대, 의대, 치대, 약대 전학과
기술 경영	50	공과대학 (산업공학과)	경영대: 경영학과 공과대: 전학과

연합 전공은 학생들이 지식의 연관성을 인식하고 자율성을 기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실용적인 연합 전공도 있어 학생들의 호응이 클 것이라 예상되었다. 그런데 첫 모집 결과 지원자는 95명에 불과했고, 총 선발 인원도 92명으로 정원의 56%에 불과하였다. 2003학년도, 2004학년도 해를 거듭할수록 지원자는 더욱 줄었고, 2005학년도에는 한국학 지원자가 하나도 없어 한국학 전공이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이렇듯 매년 지원자가 적은 이유는 대학 당국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부족, 참여 학과 간의 협력 부족, 고유한 커리큘럼 미비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연합 전공은 현재 본부의 행정 지원 증가와 과감한 구조 조정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표 3-3-12〉 연도별 연합 전공 지원자 및 최종 선발 인원(2003~2006년)

(단위: 명)

인원 \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지원자	95	36	20	29	45
최종 선발	92	36	20	29	38

출전: 교무처 제공자료

## ③ 전과(부)

서울대학교는 종전 학과(부)별 입학 정원의 10% 이내에서 여석(餘席)이 있는 경우에만 한하여 전과(부)를 허용하였다. 그러다 1999학년도부터 허용 범위를 모집 단위별 정원의 20%로 확대하고, 여석 조항을 삭제했다. 그 결과 1997학년도에는 44명이던 전과(부)생이, 1999년 44명, 2000년에는 75명, 2001년에는 119명, 2002년 153명, 2003년 151명, 2004년 140명, 2005년 140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전입과 전출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난 곳은 공과대학으로 해마다 40~50명 내외의 학생이 전입하고 비슷한 숫자의 학생이 전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입 학생 수는 경영대학과 법과대학이 가장 많으며, 인문대학이 가장 많은 전출 비율을 나타냈다.

2006년 현재 전과(부)의 허가 조건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 · 허가조건

- 전과(부)는 매 학년 말에 한하여 4회 이상 등록하고 소속 대학의 제2학년 수료 학점(66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3학년 수료 학점(98학점)에 미달되는 자로 한다. 전출 입 인원은 학과(부)별 입학 정원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 · 허가범위

- 사범계는 사범계 각 학과 간.
- 사범계 이외의 학과(부)는 사범계 이외의 각 학과(부) 간(다만 의학계, 치의학계, 약학계, 수의학계, 간호학계로의 전과(부)는 제외).
- 전공을 예약하고 입학한 자는 전과(부)를 할 수 없다.

이 외에도 최근 서울대학교의 교육 단위를 학부대학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 단계로 자유전공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무성했으나 끝내 시행되지는 못하였다. 자유전공제는 신입생의 일부를 자유전공 단위로 모집하여, 이들이 일정 기간 기초 교육 과정을 이수한 후 전공을 선택하면 해당 학교에 위탁하여 교육시키는 제도이다.

〈표 3-3-13〉 연도별 전과, 전학 현황

(단위: 명)

대학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전입	전출	전입	전출	전입	전출	전입	전출	전입	전출	전입	전출	전입	전출
인문대학	4	7	-	12	7	30	4	41	6	43	15	51	8	52
사회과학대학	13	2	19	4	19	14	24	21	28	20	32	18	29	19
자연과학대학	3	4	8	5	5	10	11	8	3	8	4	10	9	6
간호대학	-	1	-	1	-	1	-	2	-	1	-	2	-	3
경영대학	-	-	9	2	18	1	20	3	15	2	19	2	20	2
공과대학	21	9	33	23	43	35	41	47	47	45	26	33	29	39
농업생명과학대학	1	16	-	21	-	17	-	21	-	19	-	13	1	8
미술대학	1	1	-	1	-	-	-	1	1	-	2	1	1	2
법과대학	-	-	4	-	26	-	50	-	50	-	41	-	41	-
생활과학대학	-	4	1	6	1	11	2	8	-	10	1	6	1	8
음악대학	-	-	-	-	-	-	1	1	1	3	-	2	1	1
수의과대학	1	-	1	-	-	-	-	-	-	-	-	1	-	-
약학대학	-	-	-	-	-	-	-	-	-	-	-	1	-	-
계	44	44	75	75	119	119	153	153	151	151	140	140	140	140

출전: 교무처 제공자료

## (2) 학사 관리 엄정화 방안

1990년대 후반부터 일부 단과대학에서 모집 단위를 광역화함에 따라 학과와 전공 배정 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선발 기준이 요구되면서 성적 평가의 형평성이 중요해졌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학생의 성적 처리 등을 포함한 학사 관리를 보다 엄격히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1998년 8월 25일에 교무처는 학사 관리 강화를 특징으로 하는 성적 처리 규정을 1999학년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 교양 과목에 상대 평가제를 도입해 A학점은 20~30%, B학점은 30~40%, C학점 이하는 30~50%의 학생에게 부과한다. 둘째, 재수강 요건과 수강 취소 요건을 강화하여 재수강은 B+ 이하의 학점일 때만 가능하도록 한다. 또 수강 취소 가능 기간은 기존의 수업 주수 4분의 2선에서 3분의 1선으로 줄인다. 셋째, 학사 징계를 강화하여 학점이 2.0에 미달되거나 3과목 또는 6학점 이상이 F인 자에게 학사 경고를 주고, 1999학년도 신입생부터 4회 이상 학사 경고를 받은 학생은 영구 제적한다.

교무처의 안이 발표되자 학생들은 격렬하게 반대하였다. 학생들은 상대 평가제가 학

생들 간 경쟁을 심화시키며, 제적 제도는 자칫 학생 자치 활동을 억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해 9월 23일~25일 동안 진행된 학생 총투표 결과, 투표 학생 10,585명 중 84.9%인 8,986명의 학생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일부 교수들도 상대 평가의 강제가 교수들의 평가권을 침해한다며 반대 의견을 제기하였다.

1999년 5월 학장회에서 학사 관리 엄정화 방안의 시행 유보안이 부결되자, 학생들은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본부 점거 농성을 벌이는 등 더욱 격렬하게 반발하였다. 결국 대학본부는 학생회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여, 또 향후 교수와 학생이 참여하는 교육환경개선협의회를 만들어 학사 행정에 학생이 참여하는 기회를 주기로 하였다.

그해 여름 방학 동안 대학 본부와 총학생회는 5차례의 교육환경개선협의회를 열어 성적 처리 규정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먼저 재수강 요건 강화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성적표에 재수강 여부를 표기하도록 했다. 또 상대 평가제는 참작은 하되 강제성은 띠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제적 조항은 양측의 입장 차로 난항을 계속하였다. 학생회는 완전 철폐를 주장한 반면, 본부 측은 조건은 완화하되 폐지할 수 없다는 종래 입장을 고수하였다. 하지만 이 역시 2001학년도 1학기부터 학사 경고 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학사 경고 성적 기준을 2.0에서 1.7로 낮추었고, 학사 제적 대상이 된 학생은 신설된 학사지도위원회에서 심사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적을 1회 유보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2000년 1학기 말 기준으로 3회 이상 학사 경고를 받은 161명은 1회로 간주하고, 3회 미만인 1,689명은 아예 학사 경고를 면제하였다.

학사 경고 완화 조치 결과 많은 학생들이 제적 위기에서 벗어났다. 그럼에도 2001학년도에 학사 경고를 받은 학생 수는 전해보다 증가하였고, 서울대학교사상 처음으로 성적 불량 때문에 3명의 학사 제적자가 발생하였다. 이중 2명은 특례 입학자였다.

본부와 학생회 간의 협의를 통해 완화되었던 학사 관리 규정은 2004학년도 2학기를 기점으로 다시 강화되었다. 일찍이 1999년에 이미 만들어졌으나 시행하지 못했던 교양 과목 상대평가 규정을 실제로 적용한 것이다. 대학본부는 A~B의 성적이 70%를 초과할 경우 아예 전산 입력이 불가능하도록 강제했다. 단, 실험 과목과 고급 영어, 고급 수학은 제외하였다. 본부 측은 학점 인플레이를 방지하고 강의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상대 평가가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부 교수들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상대 평가가 과연 교육의 본질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표 3-3-14〉 학사 경고, 학사 제명 받은 학생 수

(단위: 명)

구분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학사경고		1,239	1,487	1,190	1,067	1,023	941
학사제적		-	3	23	21	23	39

출전: 교무처 제공자료

### (3) 계절 수업

1984학년도 34개 강좌에 943명 수강으로 시작한 계절 수업은 1996년에는 235개 강좌에 8,742명이 수강할 정도로 대학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 그러나 수강생들 대부분이 재수강이나 부족한 학점을 메우는 ‘학점 관리용’으로 계절 수업을 듣지, 애초의 도입 취지인 조기 졸업이나 부전공을 위해 계절 수업을 듣는 학생은 드문 게 현실이었다. 강사들은 학생들의 의욕 부족을 지적하였고, 학생들도 계절 수업의 과목이 한정되어 있어 강의 선택의 폭이 좁다고 불만이 많았다. 계절 수업을 맡은 교원 중에 전임 교수의 비율이 1984년 80%에서 1996년 29%로 급락한 점, 냉방 시설의 미비도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

양적으로 급속히 팽창한 계절 수업의 운영 방식에 큰 변화가 온 것은 2001년이였다. 이해 대학본부는 복수 전공 및 부전공 이수 기회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3학기제를 도입한다는 계획 하에 대대적인 개편 조치를 취하였다. 수업 기간을 4주에서 8주로 확대하고, 수강 가능 학점도 6학점에서 9학점으로 늘렸다. 또 전공과목 개설을 대폭 늘려 각 학과 한해 전공의 10%에 해당하는 400여 개의 전공과목 개설을 계획하였으며, 교수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안식년과 별도로 계절 학기 9학점을 강의하면 정규 학기 한 학기 동안 강의를 면제해 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실제 2001년의 계절 수업에 개설된 전공과목 수는 36개에 불과하였고, 이후에도 전공 수업의 개설 수는 줄곧 미미한 상태에 머물렀다. 2003년에는 교수 수가 적은 과가 정규 학기에 전공 강좌를 개설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계절 학기 참여 교수는 정규 학기 강의를 면제해 주는 혜택마저 없었다. 계절 수업을 담당할 전임 교수의 비율은 계속 줄어 1999년의 26%에서 2003년에는 19%로 감소하였다.

제도 개편에도 불구하고 계절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은 줄지 않았다. 2003년 7월에 『대학신문』이 계절 학기 수강생 28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장 큰 불만은 강의 수의 부족으로 50% 정도가 이를 꼽았다. 그 외 셔틀버스와 식당 부족, 전임 교수 부족,



〈표 3-3-15〉 연도별 계절 수업 현황

(단위: 명)

구분 \ 연도	1984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과목 수	30	91	114	120	117	127	137	166	168	169	176
강좌 수	34	235	275	296	264	309	331	344	375	386	385
수강 학생 수(명)	943	9,474	10,064	9,737	8,001	12,713	17,378	15,520	15,901	15,662	14,858

출전: 교무처 제공자료

수업 환경 열악, 교수의 열의 부족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학생들은 수업 기간과 수강 가능 학점 수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계절 수업 확대에는 찬성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이 계절 수업을 정규 학기보다 쉽게 학점을 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하는 점도 문제였다. 앞서 『대학신문』의 조사 결과 계절 수업을 수강하는 이유로 졸업 학점 보충이 35.2%, 재수강이 21.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에서 이는 잘 드러난다. 단적으로 정규 학기에는 정원 부족으로 대규모로 폐강된 대학 국어와 대학 영어 과목이 계절 학기에는 조기 마감되는 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 이들 과목이 매매·교환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대학 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계절 수업을 2학기제에서 다학기제로 전환하기 위한 과정으로 삼을 것인지, 단지 정규 학기를 보완하는 차원으로 할 것인지, 앞으로 그 성격과 목적을 분명히 하고 이에 맞게 제도를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연도별 계절 수업의 현황은 〈표 3-3-15〉와 같다.



## 제4장 장학 제도와 학생 교류 확대

### 제 1 절 장학 제도 확충

#### 1) 초창기 장학 제도

서울대학교에 장학 제도가 공식적으로 등장한 것은 개교한 지 3년 뒤인 1948년 4월이었다. 당시 물가가 계속 치솟고 대학 수업료가 인상되어 학비 마련이 어려운 학생들이 늘었다. 이에 서울대학교 이사회가 장학 제도 실시를 논의한 끝에 서울대학교 최초로 우리나라 최초로 ‘장학금급여규정’을 제정하였다.

모두 8개 조로 이루어진 이 장학금급여규정은 ① 학과 성적이 평균 80점 이상인 학생 중에서 각 학과별로 1명씩 ‘특대생’을 선정하여 수업료를 면제하고, ② 학과 성적이 평균 70점 이상인 학생 중에서는 ‘급비생’을 선정하되 소정의 의무(학교의 일반 사무 보조 등)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수업료를 지급한다는 것이 그 골자였다. 이 규정에 따라 당시 서울대학교 전체 학생 수의 약 10%에 해당하는 880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았다. 서울대학교는 국대안 파동 등 여러 혼란 속에서도 장학 제도를 계속 실시하여 학생들의 학구열을 크게 진작하였으나, 1950년 한국전쟁의 발발로 시행 2년 만에 중단하였다.

한국전쟁 기간 중에는 많은 학생들이 전쟁터로 나갔고, 나머지 학생들 중에도 학비를 마련할 수 없어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이에 대학 당국은 장학 제도를 부활하기로 결의, 문교부에 학생들의 대학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는 규정을 제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문교부는 이 요청을 받아들여 1952년 4월 13일 훈령 제18호로 면제 장학 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울대학교는 그해 2학기부터 이를 실시하였는데, 전체 등록 학생 가운데 10%를 수혜 대상으로 하였으며, 학력과 인품이 우수하나 경제적으로 곤란하여 등록금 납입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만 지급하였다.

1953년 7월에 휴전이 이루어지고 난 후, 그해 10월에 열린 학장회는 장학 제도를 개선 강화하기로 결의하고, 종전의 장학 규정들을 폐기하는 대신 새로운 규정을 제정하였다. 새 규정 중 장학금 지급 대상자의 요건은 ① 품행이 방정하고 성적이 우량한 자, ② 가정이 극빈하여 학업의 계속이 곤란한 자, ③ 명예 제대자(상이군인 포함)로서 가정이 빈곤한 자, ④ 순군선열, 전몰 군경의 유가족으로서 가정이 빈곤한 자, ⑤ 교육자의 직계 자녀로서 성적이 양호한 자였다. 이 장학 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대학 당국은 한미재단에게 받은 원조금 48만 원을 근간으로 하고, 그 뒤 서울대학교 재건재단 위원회에서 보조해 준 107만 원, 국제산업의 회사금 212만 원 등 모두 474만 2,500원을 장학 기금으로 확보하였다. 그리고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학생을 매 학기 50명씩 선정하여 1인당 5천 원씩 지급하였다.

그런데 대학 당국은 위의 장학금 제도 외에도 '상이군경 특별 장학금'을 별도로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당시 전쟁에 참여했다가 부상을 입고 학교로 돌아오는 학생들이 적지 않아, 이들을 위해 마련한 특별 장학금이였다. 이 제도는 1952학년도 2학기부터 실시하였는데, 그해 약 7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휴전으로 전쟁이 끝나자 대학으로 돌아오는 상이군경 학생들의 수는 더욱 증가하였고, 이전의 특별 장학금 제도만으로 부족한 상황이 되었다. 이에 대학 당국은 1954년 5월 17일 '상이군경학생장학금 지급규정'을 새로 제정하여, 상이군경 학생들 중 명예 제대, 퇴역자로서 경제적으로 곤란하여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출석률과 학업 성적에 따라 갑, 을, 병 등 3종으로 구분하고 1인당 연간 최고 17,500원에서 최저 5,000원까지 지급하였다.

이상과 같은 여러 형태의 장학금과 지급 규정에 따라 1954학년도에는 명예 제대자 287명, 순군선열 비속 4명, 서울시교육위원회 자녀 167명, 서울대학교 교직원 직계 자녀 96명, 그리고 서울대학교 장학회에서 지급한 장학금을 받은 학생 168명 등 모두 722명의 학생들이 장학 혜택을 받았다.

〈표 3-4-1〉 1959년도 각종 장학금 지급 통계표

(단위: 명, 환)

종별 학기별	국비 장학금		동창회 장학금		도 장학금		서울대학교 장학회 장학금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제1학기	85	4,250,000	15	350,000	4	240,000	48	960,000
제2학기	92	4,600,000	9	180,000	4	240,000	48	960,000
계	177	8,850,000	24	530,000	8	480,000	96	1,920,000

종별 학기별	수업료 면제		후원회비 면제		기타		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제1학기	2,723	40,845,000	476	7,938,000	119	4,467,000	3,470	59,050,000
제2학기	2,743	41,145,000	458	7,680,000	126	4,883,700	3,480	59,668,700
계	5,466	81,990,000	934	15,618,000	245	9,350,700	6,950	118,738,700

출전: 김용희 편, 1988 『서울대학교장학40년사(1946~1986)』, 10쪽.

1955학년도 2학기부터는 서울대학교 장학회의 장학금을 받는 학생 수가 대폭 증가하여, 종전에는 한 학기 100명 미만이던 것이 200명대로 늘었다. 그리고 1956학년도부터 그 액수가 1만 환에서 2만 환으로 올랐다. 수업료 면제 혜택도 계속 늘어 1957학년도에 1,580명, 1958학년도에 1,932명 등 등록생 중 20% 남짓한 학생들이 혜택을 받았다. 이 밖에 교내외에서 많은 독지가 또는 단체들이 장학금을 보내와 장학 사업은 더욱 활기를 띠었다. 그 결과 1959학년도에는 연인원 6,950명이 총 1억 1,873만 8,700환의 장학 혜택을 받기에 이르렀다.

## 2) 장학 제도 정착

### (1) 장학금 수혜율 증가

1960년대 들어 서울대학교 장학금 종류가 많아졌고, 그 지급액과 수혜자도 크게 늘어났다. 이는 사회 각계에서 장학금이 답지하고, 교내 장학 제도를 계속 확대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1961년 10.6%에 불과하였던 장학금 수혜율이 1967년에는 35.9%까지 올라갔다. 이후 수혜율은 더욱 늘어나 1970년도에 39.0%, 1974년도에 45.2%의 학생이 장학금 혜택을 받았다.

1960년대 이후 서울대학교에서 지급한 장학금 종류는 크게 면제 장학금, 대여 장학

〈표 3-4-2〉 장학금 수혜자 상황(1960~1974년)

(단위: 명, %)

연도	구분	수혜자 수	등록생 수	수혜율
1960		2,738	25,817	10.6
1961		3,100	24,274	12.4
1962		5,753	22,710	29.6
1963		6,705	24,755	27.1
1964		6,200	29,037	21.3
1965		7,474	25,582	29.2
1966		7,784	23,331	33.4
1967		7,804	21,718	35.9
1968		8,105	23,494	34.5
1969		9,361	25,704	36.4
1970		10,503	26,915	39.0
1971		11,493	26,799	42.9
1972		12,378	29,111	42.5
1973		13,542	30,456	44.5
1974		14,216	31,460	45.2

비고: 등록생 수는 1, 2학기를 합한 것임.

출전: 1960~1966년까지는 『서울대학교 장학 40년사(1946~1986)』 22쪽을, 그 이후는 각 연도 『통계연보』를 참고하여 작성.

금, 급여 장학금 및 교외 장학금으로 나눌 수 있다.

면제 장학금은 수업료 및 기성회비 등 학비를 면제해 주는 제도로, 1960년대 이전에도 재학생의 약 10%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학생에게 수업료와 후원회비를 면제해 주었다. 그러다가 1960년대는 15%, 1970년대는 20%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 수업료를 면제해 주었다.

대여 장학금은 1961년 4월에 법률 제603호에 의거하여,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 중 재능은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수학이 곤란한 학생들에게 정부가 매 학기 당 1만 5천 원을 무이자로 지급하고, 그 대여금의 상환은 졸업 후 17년 이내에 일시 또는 매년 조금씩 갚도록 한 제도이다. 1963년 6월의 화폐 개혁으로 지급을 일시 중단한 적도 있었으나 이 제도는 1971년까지 계속되었다. 하지만 대여 장학금의 상환 실적은 극히 부진하였다.

급여 장학금은 서울대학교 장학회(합춘장학회)의 장학금과 같이 금전을 직접 지급하는 것이고, 교외 장학금은 학교 밖의 독지가 또는 단체가 희사하여 서울대생에게 지급

〈표 3-4-3〉 서울대학교 대외 장학금 연도별 지급표

(단위: 원)

년도	연인원	금액	년도	연인원	금액
1961	243	3,482,500	1967	154	2,310,000
1962	448	4,121,250	1968	128	2,240,000
1963	406	4,060,000	1969	142	2,485,000
1964	254	2,540,000	1970	150	2,625,000
1965	254	2,540,000	1971	78	1,365,000
1966	224	2,240,000	합계	2,481	30,008,750

출전: 김용희 편, 1988 『서울대학교 장학 40년사(1946~1986)』, 24쪽.

한 장학금을 말한다.

한편 종래 각 단과대학별로 선정, 추천하던 장학생 선발 기준이 너무 막연하고 주관적인 요소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 1962년 3월에 장학생 급여 순서를 재조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대학 전체 재학생 중 성적이 우수한 순서대로 선발하되, 종류별 장학금 배정 인원의 3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또 무의탁자이거나 부모가 65세 이상 노령 또는 병으로 생활 능력이 없는 경우, 부모가 있되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등은 극빈자로 보아, 이들 중 종류별 배정 인원의 50% 내에서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 순서로 선정하도록 했다. 정부도 종래 학업 성적을 장학생 선정 기준으로 우선하던 것에서, 학업 성적이 우수하지 않은 학생이라도 극빈자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서울대학교는 1965학년도 1학기부터 이 방침에 따라 장학금 지급을 시행하였다.

## (2) 교외 장학금 증가

4·19 혁명을 계기로 대학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새로워지고, 5·16 쿠데타 이후 군사 정부에서 기업체들로 하여 대학 장학 사업에 참여할 것을 유도함에 따라, 1960년대는 과거에 비해 외부에서 기탁하는 장학금이 훨씬 증가하였다.

4·19 혁명 이후 들어온 장학금 가운데 규모가 큰 것으로 3·1장학금과 삼성장학금을 들 수 있다. 3·1장학금은 대한양회공업주식회사가 3·1 정신을 계승하고 제2공화국의 번영을 염원하는 취지에서 창설한 것으로, 서울대생 47명에게 1인당 연 30만 환씩 지급하였다. 삼성장학금은 삼성재단에서 만든 것으로, 학업이 우수하나 가정이 빈한한 학생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학생 100명에게 1인당 30만 환씩 지급하였다.

5·16 쿠데타 이후 생긴 교외 장학금 중 대표적인 것은 5·16장학금과 동방생명장학금이다. 5·16장학금은 재단법인 5·16장학회에서 1963년에 창설한 것으로, 매학기 평

군 70여 명의 학생에게 1인당 만환씩 지급하였다. 동방생명장학금은 인문·사회 과학 분야 전공의 학생 50명에게 1인당 연 30만 환씩 지급하였다.

비교적 규모가 큰 이상의 장학금 외에 학외에서 다수의 장학금 지급 의뢰가 있어, 서울대학교의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었다.

### (3) 함춘장학회(서울대학교 장학회)와 1억 원 모금 운동

서울대학교는 1954년 4월에 설립한 서울대학교 장학회(비법인체)를 통해 학교 자체 기금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다가, 1959년 10월 20일에 이를 '재단법인 서울대학교 함춘장학회'로 전환하였다. 함춘장학회 설립은 이전까지 학내 자체적으로 장학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한계에 이르자, 사회 각계 각층의 협조를 통하여 이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었다.

때마침 사회적으로 '국가 재건'의 기운이 팽배하여 유능한 인재 육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었으므로, 대학 당국은 사회 각계각층의 유지들에게 장학 육성을 위한 필요성을 역설하는 동시에 협조를 호소하였다. 그리고 기금 획득에 필요한 섭외 직원을 임명, 그 업무를 전담토록 하여 기업체를 직접 방문하는 등 장학금 유치를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1960년대 말에 이르러서도 함춘장학금은 1950년대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극히 제한된 사업밖에 할 수 없자 1968년 10월 10일에 열린 월례장학회는 서울대학교 동문들의 성원은 물론, 학부형과 사회 유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며 장학 기금 1억 원 모금 운동을 벌이기로 의결하였다. 장학금 납입 증서는 1천 원권, 5천 원권, 1만 원권, 5만 원권, 10만 원권 등 5종류를 발행하였으며, 모집 기간은 1968년 11월 1일부터 1969년 10월 30일까지로 하였다.

실제 모금 활동은 각 대학에 모금 금액을 배당하여 학장 책임 하에 이루어지도록 했으며, 서울대학교 동문, 학부형들의 참여와 사회 유지들의 성원을 촉구하였다. 총장과 각 대학장들은 학부형과 간담회를 개최하거나, 지역별, 직장별 동창회를 조직하는 한편 기업체, 단체 또는 뜻있는 시민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였다. 또 동창회 조직을 통한 활발한 모금을 기대하고 단과대학별로 분산된 동창회를 일원화하였다. 그 결과 1969년에 서울대학교 동창회가 발족하였다.

1억 원 모금 운동의 시작 초기에는 활발한 모금이 이루어져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점차 실적이 줄어들어 목표 기한이 2년 경과한 1970년 9월에도 실적은 목표치의 38.9%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부진은 각 대학별로 적극적인 모금 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동창

회 활동이 부진했기 때문이었다.

1970년 7월에는 합춘장학회란 이름이 내포하는 의미가 협소하고, 서울대학교를 대표하는 명칭으로 부적합하다는 이유에서 서울대학교 장학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여기에는 범대학 차원의 모금 운동 참여와 장학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이러한 노력 끝에 1976년 마침내 1억 원 모금을 달성하였다.

#### (4) 장학금급여규정 개정과 특별 장학금 제도 실시

서울대학교는 1975년에 관악 캠퍼스 이전 후 장학 제도를 대폭 개편하였는데, 그 계기는 1976년 1월에 있었던 장학금급여규정 개정이었다.

이 개정을 통해 소액을 다수에게 지급하던 방침을 공납금 전액에 해당하는 큰 금액을 소수에게 지급하는 방침으로 바꾸었다. 또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우선 선정하던 것도, 가정 형편이 곤란하여 학비 조달이 어려운 학생을 뽑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따라서 1960년대 이래 계속 증가하여 1970년대 초반 40%대를 유지하던 장학금 수혜율은 1975년을 고비로 다시 30%대로 하락하였다.

이처럼 장학 제도의 운영 방침을 전환한 배경에는 문교부의 권고가 있었다. 문교부는 소액을 다수에게 지급하는 방식은 수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학비 보조가 되지 않을 뿐 더러 장학금에 대한 감사의 정이 결여되는 등 실효가 없다고 보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장학금을 집중적으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문교부는 또 “지도 교수의 절대적인 권위로 장학생을 선정토록” 하고, 해당 지도 교수는 사후 지도에도 확고한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1976년에는 또 장학금 급여 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총장 직속으로 장학금관리

〈표 3-4-4〉 장학금 수혜자 상황(1975~1980년)

(단위: 명, %)

연도	수혜자 수	등록생 수	수혜율
1975	10,300	31,522	32.6
1976	9,910	31,945	31.0
1977	10,451	33,540	31.2
1978	11,222	33,920	33.1
1979	12,442	36,038	34.5
1980	16,602	39,400	42.1

비고: 등록생 수는 1, 2학기를 합한 것임.

출전: 『통계연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이 위원회는 장학금급여규정에 관한 기본 방침, 장학생 배정 등을 심의하였다.

1976년의 장학금급여규정 개정에서 특기할 점은 특별 장학금 제도 신설이다. 이는 장학생 선정 기준에 들지 않는 학생일지라도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불안 없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가난에서 기인하는 부정적인 시국관과 사회관을 순화·선도하여 국가와 사회에 유익한 인재를 양성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또 대상자 선정에 공정성과 정확성을 기하고, 장학금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극빈 학생을 발굴·확인한다는 이유로 교직원들이 방학 기간에 전국에 걸쳐 가정 방문을 실시토록 하였다. 하지만 이 제도는 실질적으로 운동권 학생들을 '선도' 하는 데 더 치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1976학년도 여름·겨울 방학 기간에 484명의 가정을 방문하였는데, 그 중 빈곤 학생 수는 419명이었다. 수혜 인원은 1976학년도에 829명, 1977학년도에 772명, 1978학년도에 856명이었다.

### 3) 장학 제도 개선

#### (1) 근로 봉사 장학금과 우등 장학금 신설

1980년 이른바 7·30 교육개혁조치로 과외를 금지하면서, 많은 서울대생들이 주요 수입원이었던 가정교사 자리를 잃었다. 게다가 정부는 국·공립대학 등록금을 점차 사립대학 등록금의 80%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목표 하에, 1981학년도 1학기 등록금을 40% 정도 대폭 인상하였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느끼는 경제적 부담은 더욱 커졌다.

정부와 대학 당국은 당장 학비 조달이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단기 대책을 마련하였다. 우선 이들에게 등록금 전액을 면제해 주고, 일부에게는 별도로 생활비를 대여해 주어 졸업 후 5년 이내에 상환토록 하였다. 그 결과 서울대학교에서 2,196명의 학생이 5억 727만 6천 원을 정부로부터 지급받았다.

대학 당국은 장기적인 대책으로 직업보도실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학생들이 학내의 각종 기관에서 일하면서 스스로 학비를 마련하는 근로 봉사 장학금 제도를 신설하였다. 1981학년도 1학기 시행 첫해 250명 남짓한 인원을 선발하였는데, 그후 점차 인원을 늘려 1984학년도에는 500명의 학생이 실험실, 도서관, 식당, 연구소, 관악사 등에서 근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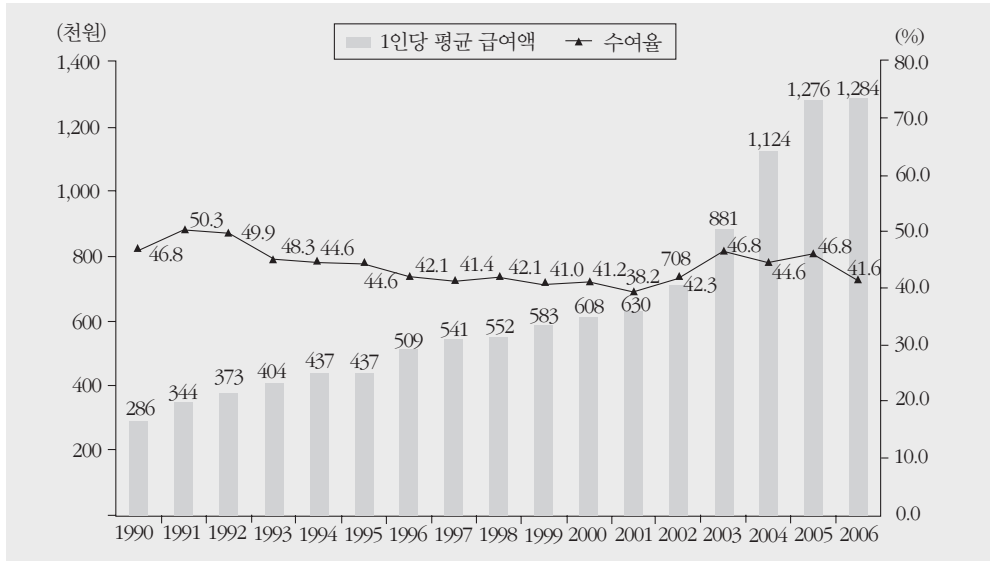
하였다. 이들은 1일 2시간, 월 40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매월 5만 원씩 8개월간 장학금을 받았다. 시행 초기 근로 봉사 장학생 제도는 많은 학생들의 관심을 끌었고 호응도 좋았다. 하지만 1989년 대학생 과외가 전면 허용되면서 지원자가 대폭 줄었고, 학생들의 관심도 많이 사라져 1992년에는 200명 수준까지 인원이 줄었다. 이에 장학금 액수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1990년 월 30시간 8만 원으로, 1996년 월 10만 원으로 인상하였다.

이와 더불어 서울대학교는 1982학년도 2학기에 우등 장학금 제도를 신설하였다. 종래 각종 교내 장학금은 성적보다는 경제적 곤란을 기준으로 장학생을 선정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주로 교외 장학금을 주었다. 이에 비해 이 제도는 학업 성적이 아주 우수한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내 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 면제 혜택이 주어졌다. 4개 학기 이상을 수료한 학생으로 전체 학기 평점이 3.6 이상을 얻은 사람에게 지급하였는데, 학문의 균등한 발전을 위해 학과당 1명은 필수적으로 선발하고, 기준 성적을 넘는 학생이 없는 학과의 경우 성적이 가장 우수한 학생 1명을 선발하였다. 이 제도도 이후 성적 우수 장학금으로 명칭을 바꾸어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다.

한편 서울대학교는 1981년부터 인상된 등록금의 상당 부분을 장학금 재원으로 돌렸다. 이로써 등록금 부담 증가와 동시에 장학금 수혜율도 이전에 비해 더욱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종전 30% 내외였던 장학금 수혜율이 1980학년도 2학기부터 50%로 급증하였고, 1985학년도까지 대체로 50~60% 선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높은 수혜율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의 재원이 등록금에 대부분 의지하는 것이 큰 문제였다. 당장 1985학년도부터 재학생이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자 주로 등록금에 의존하던 장학 제도는 위기에 봉착하였고, 이에 서울대학교는 적극적인 교외 장학금 유치와 정부 차원의 장학기금 확충이라는 과제에 직면했다.

그 일환으로 1990년 5월, 서울대학교 장학회와 서울대학교 학술연구재단을 통합한 재단법인 서울대학교 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 출범하였다. 발전기금은 교원의 교육과 연구 활동, 학술 교류 지원 등의 사업과 함께 학생 장학 사업에도 힘썼는데, 연인원 1,000명 남짓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생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발전기금은 학내외에서 기금을 모금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교외 각종 장학 단체의 장학금 지급 의뢰도 많이 들어온다. 하지만 교외 장학금의 비율은 그리 높지 않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장학금 총액에서 교내 장학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70%~80%나 되었으며, 그나마 2003년부터 이공계 국가 장학금 신설로 그 비중이

그림 3-4-1 학사과정 장학금 수혜율 및 1인당 수혜액 추이(1990~2006). 비고: 1학기, 2학기를 합산한 수치임(단, 2006년은 1학기). 출처: 『통계연보』



57.4%까지 내려갔다. 이공계 국가 장학금은 학생들의 이공계 대학 진학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입학금과 수업료, 그리고 기성회비와 교재비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198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서울대학교 학사과정 장학금 수혜율은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에 있긴 하나 줄곧 40%대에 머물고 있다. 이에 반해 1인당 수혜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물가 및 등록금 상승률을 같이 고려했을 때 학생들이 느끼는 실질적인 혜택은 그리 크게 증가하지 못한 형편이다. 앞으로 교외 장학금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장학금 수혜율과 지급액을 더욱 증대할 필요가 있다.

## (2) 대학원생을 위한 장학 제도

서울대학교는 대학원 중점 육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1978년 11월에 '서울대학교 대학원중심대학특성화계획안'을 정부에 제출하였다. 정부도 이에 적극 호응하여 국가 발전에 필요한 우수 교수와 연구 요원을 확보하기 위해 우선 자연계와 공학계 학생 위주로 교수 요원을 국내에서 양성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1979~1981년에 걸쳐 해마다 400명의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교수 요원으로 선발된 학생은 재학 2년 간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를 면제 받았고, 연간 50~60만 원을 별도로 받았다. 이들은 또 병역 대신 문교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에서 2년 간 근무하는 혜택도 받았다.

〈표 3-4-5〉 2002~2003학년도 대학원 장학금 지급 및 학비 감면 현황

(단위: 명, 천 원)

구분		2002년	2003년
학생 수(A)		19,189	20,173
장학금 수혜 인원(B)		9,629	10,447
장학금 지급 총액(C)		6,618,827	7,604,817
B/A(%)		50.2	51.8
C/B(원)		687,520	727,940
장학금 구성비(%)	교외 장학금	14.53	16.86
	교내 장학금	85.47	83.14
	면제 장학금	59.5	61.1
	조수 급여	18.9	20.3
	서울대 발전 기금	7.07	1.74

출전: 『서울대학교백서(2002~2003)』 73쪽.

인문·사회계도 1979학년도부터 75명을 교수 및 연구 요원 장학생으로 선발하였다. 다만 이들은 자연계 학생들과 달리 병역 특혜를 받지 못했으며, 서울대학교 장학회가 기성회에서 지원받아 자연계 학생들에 준하는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이 교수 및 연구 요원 장학생 제도는 1981학년도 입학생이 졸업하는 1982년까지 시행하였는데, 신입생 정원의 24%에 해당하는 학생이 장학 혜택을 받아 서울대학교 장학 사업의 획기적 조치로 평가받았다.

1982학년도에는 조수(T.A.) 장학금 제도를 신설하였다. 이해부터 교수의 연구와 강의를 보조하기 위해 750여 명의 대학원생을 선발하여, 수업료를 면제하고 교재비로 월 5만 원씩 10개월간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장학금 액수는 월 7만 원으로 인상되었다가 1996학년도 2학기부터 다시 월 12만 원으로 올랐다. 인원은 줄곧 700명~800명 내외를 유지하였다. 조수 장학금 제도는 20년 넘게 대학원생을 위한 장학 제도로 나름대로 역할을 다하였으나, 장학금 액수가 부족하여 생활비로 큰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1975년 종합화 이후 서울대학교는 대학원 중심 대학을 지향하였으나 2004년까지도 대학원생을 위한 장학금은 주로 학비 감면이 대부분이었고, 실제 대학원생들이 연구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적 지원은 여전히 미비한 상태였다.

#### 4) 대학원 장학 제도 강화

서울대학교 장학 제도는 2005학년도를 기점으로 대폭 변화한다. 대학원에 강의 연구 지원 장학 제도를 신설하였고, 학부생 위주인 근로 봉사 장학 제도를 활성화하였다. 이 두 조치는 모두 이전부터 줄곧 문제로 지적되던 부분을 개선한 것이다.

강의 연구 지원 장학 제도는 서울대학교가 대학원 중심 대학을 표방한 이래 줄곧 미비한 상태로 있던 대학원생들에 대한 장학 제도를 파격적으로 강화한 것이다. 이 제도는 대학원생이 연구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수 1인당 한 명의 학생에게 등록금 전액과 함께 박사과정은 매월 60만 원, 석사과정은 매월 40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한다. 대신 월 12만 원을 지급하던 기존의 조수 장학금 제도는 폐지하였다. 2005학년도에 이 제도를 통해 연인원 2,902명에게 총 88억 2,413만 1천 원을 지급하였으며, 학비 감면을 포함한 대학원 장학금 지급 총액은 전해 72억 3,151만 9천 원에서 184억 9,919만 2천 원으로 2.6배나 늘었다.

근로 봉사 장학 제도는 노동에 대한 보상이라는 좋은 취지와 교육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장학금 액수가 너무 적어 그동안 학생들의 외면을 받았다. 이에 2005학년도부터 학생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금 액수와 선발 인원을 크게 늘렸다. 월 32시간 근무하고 매월 12만 원씩 받던 것에서, 월 40시간 근무에 20만 원, 월 60시간 근무에 30만 원을 받는 두 가지 유형으로 다양화하였다. 또 선발 인원도 390명에서 900명으로 늘렸으며, 다른 장학금과의 이중 수혜도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학부 장학금 총액은 전해와 크게 차이가 없었다. 이는 학비 감면 장학금 혜택을 상당히 줄였기 때문이다.

시행 초기인 만큼 이들 제도는 아직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 도입 논의가 있을 때부터 학내외에서 많은 주목을 받은 강의 연구 지원 장학 제도는, 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나 장학생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과제로 떠올랐다. 또 주로 장학금이 박사과정생들에게 집중되어, 석사과정 학생들은 장학 혜택에서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근로 봉사 장학 제도는 선정 방식이 각 기관마다 다른 데다 모집 홍보가 잘 되지 않은 점, 인원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관리가 힘들어진 것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그리고 기존의 기성회비 면제 장학금을 없앴기 때문에, 학부생들은 성적이 최상위 1%에 들어 성적 우수 장학금(등록금 전액 면제)을 받지 않는 한 면제 장학금 혜택을 받기 어려워졌다. 기성회비 면제 장학금이 없어진 것은 대학원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새 장학 제도는 학생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대신, 혜택을 받는 학생 수는 줄인 셈이 됐다. 이에 따라 2005학년도 교내 장학금 총액은 전년도 172억 4,075만 8천 원에서 286억 5,963만 7천 원으로 증가하였으나, 수혜 인원은 24,852명에서 22,397명으로 줄었고, 수혜율도 학부의 경우 35.8%에서 32.7%로, 대학원의 경우 48.3%에서 44.2%로 감소하였다. 앞으로는 소수 다액이나, 다수 소액이나 하는 논란을 넘어, 장학금 재원을 더욱 늘림으로써 보다 많은 학생들이 실질적인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04~2005학년도 서울대학교 장학금 지급 현황은 <표 3-4-6>과 같다.

2006학년도 1학기 현재 서울대학교가 시행하고 있는 장학 제도 종류를 교내 장학금과 교외 장학금으로 구분하면 <표 3-4-7>과 같다.

그리고 1997학년도~2006학년도 1학기의 기간에 본교에 장학금을 기탁한 단체는 아래와 같다.

금강장학회, 금강사대자 장학회, 경주장학회, 금호문화재단, 경방육영회, 관악회, 권기옥 장학회, 금하장학회, 금호아시아나그룹, 고촌재단, 농협장학회, 능동장학회, 동부문화재단, 대한전기협회장학회, 동원육영재단, 단암장학재단, 만오교육장학회, 만포장학회, 무진과학기술장학회, 방일영문화재단, 보령장학회, 봉신장학회, 북청군장학회, 사리원시봉산군장학회, 서울대발전기금, 서현장학재단, 성옥문화재단, 산학협동재단, 송원김영환장학재단, 우덕재단, 롯데장학재단, 3.1문화재단, 수당장학회, 수암장학문화재단, 서남재단, 삼송장학회, 신라문화장학재단, 사도장학금, 사하양지장학회, 상덕장학회, 영풍문화재단, 연강재단, 유한재단, 인촌기념회, LG 연암문화재단, 연재장학회, 양영재단, 양백재단, 아산사회복지재단, 인산장학문화재단, 연철장학회, 우산육영회, 안중근의사장학회, 우정장학문화재단, 일산장학회, 오운문화재단, 우석문화재단, 일주학술문화재단, 한국IBM(주), 정수장학회, 정현재단,



그림 3-4-2 2005학년도 2학기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장학금 수여식



그림 3-4-3 2006학년도 2학기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장학금 수여식 전체 기념촬영

(단위: 명, 원, %)

〈표 3-4-6〉 2004~2005학년도 장학금 지급 현황

	2004			2005		
	대학	대학원	소계	대학	대학원	소계
등록생 수	41,670	20,568	62,238	39,891	21,141	61,032
학비 감면	인원	14,073	7,455	11,637	5,942	17,579
	금액	9,505,389	5,763,919	15,269,308	8,549,295	17,523,161
조수	인원	-	2,473	-	-	-
	금액	-	1,467,600	-	-	-
교내	인원	-	-	-	2,902	2,902
	금액	-	-	-	8,824,131	8,824,131
봉사	인원	851	-	1,413	503	1,196
	금액	503,850	-	1,611,150	701,195	2,312,345
계	인원	14,924	9,928	13,050	9,347	22,397
	금액	10,009,239	7,231,519	17,240,758	18,499,192	28,659,637
	수혜율	35.8	48.3	39.9	32.7	36.7
(재)서울대학교	인원	331	73	220	226	446
	금액	709,396	188,568	511,783	637,370	1,149,153
교외 장학 단체	인원	5,438	717	5,280	1,047	6,327
	금액	12,545,010	1,835,023	13,044,317	2,528,419	15,572,736
계	인원	5,769	790	5,500	1,237	6,737
	금액	13,254,406	2,023,591	13,556,100	3,165,789	16,721,889
수혜율	인원	13.8	3.8	13.8	6.0	11.1
	금액	13.8	3.8	13.8	6.0	11.1
합계	인원	20,693	10,718	18,550	10,620	29,170
	금액	23,263,645	9,255,110	23,716,545	21,664,981	45,381,526
	수혜율	49.7	52.1	50.5	46.5	47.8

출전: 『통계연보』

〈표 3-4-7〉 2006학년도 1학기 현재 교내·외 장학금 종류

교내 장학금	교외 장학금
학비 지원 및 면제 장학금(학사 및 대학원과정)	이공계 무상 국가 장학금(학사 및 대학원과정)
성적 우수 장학금(학사과정)	서울대학교 발전 기금 장학금(학사 및 대학원과정)
신입생 입학 우수 장학금(학사과정)	기타 각종 교외 장학금(학사 및 대학원과정)
근로 봉사 장학금(학사과정 및 대학원과정)	
강의·연구 지원 장학금(대학원과정)	
유학생 장학금(학사 및 대학원과정)	

포철장학회(산학), 제주장학재단, 종하장학회, 종세육영재단, 전북애향장학재단, 정산장학재단, 중앙인사위원회(위탁교육생), 충무처국비장학금, 천만장학회, 창강재단, 춘강문화장학재단, 해성문화재단, 한국과학재단, 함경북도장학회, 현송문화재단, 한불문화재단, 한승장학회, 한국유리육영회, 학산기술장학재단, 한원장학회, (주)KT, 한국화학공학회, 한국지도자육성재단, 해춘장학회, 함덕장학회, 노엽문화재단, 동철문화재단, 보해장학회, 증원장학회, 교육부 박사과정(연구장학금), 벽산장학문화재단, 삼보장학회, 대산농촌문화재단, 서암학술장학재단, 월악장학문화재단, 홍산장학재단, 청양군장학회, 장성장학회, 하정학술장학회, 성남장학회, 옥포장학회, 운경재단, 해암학술장학재단, 한무숙재단, 학계장학재단, 문수문화재단, 삼미벽지, 형애장학회, 모암장학회, 서산인재육성재단, 은성장학회, 박영장학문화재단, 송파재단, 한국노총장학재단, 해군본부, 신흥군장학회, 성음장학재단, 한라공조주식회사, 청합장학회,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충청북도문정장학회, 남강장학회,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한국사회개발연구원, 소전재단, 삼척향토장학재단, 주심장학재단, 관악장학회, 김유비장학회, 담양장학회, 승국문화재단, 대진장학회, 연당장학회, 고성군장학회, 동서식품장학회, 강생장학회, 운봉장학재단, 한남여객운수, 소순산업, 우봉장학회, LG정보통신(주)(산학), 영서장학회, 삼화지봉장학재단, 하림장학재단, 한국원자력문화재단, 남춘장학회, 이수교장학재단, 동해시민장학회, 우성문화재단, 오투기재단, 광명애향장학회, 춘천시애향장학회, 부산진구장학회, 인천광역시남구, 국방과학연구소, 성보장학회, 현대영어사(주), 제닛 리 재단, 태백시민향토장학회, 아남특지장학회, 홍성대특지장학회, 이길여특지장학회, 대학원동창회, 전주로타리클럽, 부산고촌장학재단, 담양군청, 춘천소방서, 목포시유달장학회, 화천장학회, 홍성지청선도장학회, 김찬숙.한영특지장학회, 장세일특지장학회, 박주탁특지장학회, 전용성기금(특지), 음대기금장학회, 공군본부, 한글재단, 한국쓰리엠, 김춘자장학금, 대웅재단, 각대학(기타)장학금, 외수한일교류장학회, 김민석의원, 동일기연 주식회사, 일백문화재단, 여흥장학회, 홍콩상하이은행, LG복지재단, 육하통일교육장학재단, 치불회기금장학회, 이세진기금장학회, 이도경.이찬진특지장학회, 양은숙특지장학회, 정팔도특지장학회, 이금옥.황해근특지장학회, 염곡문화재단, 대상문화재단, 동원생활관, 재외동포



재단, 한국건축지산장학회, 대한약사회(여약사, 하봉), 국립문화재연구소, 5.18기념재단, 과천시애향장학회, 정석규특지장학회, 이중기특지장학회, 김병순·이지호특지장학회, 화학과 동창회기금장학회, 휴먼커뮤니케이션&컨설팅, 평창장학회, 피씨뱅크(주), 한국네슬레(주), 한국라이온스클럽협회, 흥인문화재단, 해심장학회, 영도육영회, 엘트웰민초장학재단, 중앙인사위원회(국비장학생), 동래위생공사, 한일문화협회, 고화장학회, 진천군장학회, 윤신근 동물사랑장학회, 두울장학재단, 삼일물산, 모니카재단, 삼성캐피탈, 현대자동차, 용운장학회, 김포장학회, 삼선장학문화재단, 성천장학복지회, 거제시,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박성연 장학회, 건국우유장학회, 한국대학봉사회, 배방면, 김천시, 르메이에르(주), 평택시에향장학회, 명학장학회, 시흥시, 정대영·민완기특지장학회, 김종기 특지장학회, 홍상욱 특지장학회, 이원규 기금장학회, 대한법무사협회, 광주시민장학회, 정주장학회, 송영록, 덕성인더스트리 주식회사, 엘트웰주식회사, 호연장학재단,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임광(임광수)특지장학회, 오인석 특지장학회, 송원문화재단, 우원장학문화재단, 관정이중환교육재단, 송천재단, 청호 불교문화원, 손치무특지장학회, 안성철·손운숙특지장학회, 정충시특지장학회, 광영필특지장학회, 이해원특지장학회, 명태현특지장학회, 대우증권(주), 오성장학재단, 한국산업안전공단, 장학순특지장학회, 김정희결연장학금, 광영필특지장학회, 광동헌기금장학회, 목촌5부자김도창특지장학회, 천정곤결연장학금, 용인시시민장학회, 충청남도서산소방서, 충청남도논산소방서, 하정육영장학재단, 한국라이온스354-C장학회, 고산장학회, 대인장학회, 대한건설협회, 한석경함흥장학회, 열림장학재단, 운송조창석문화재단, 박현주재단, 수리과학부 특지장학회, 이지호특지장학회, 관후회 결연장학회, 수인장학재단, 이스테파노(재원)장학회, 삼성생명보험(주), 삼성카드(주), 부용장학재단, 재암문화재단, 선암장학재단, 삼성증권주식회사, 광산소방서, 삼성화재해상보험(주), 화성시에향장학회, 부산시동래소방서, 전라북도포남무장학재단, 국제교육진흥원, 생활협동조합, 삼성화재안내견학교,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주), 사보이장학회, 이상범·고임석(특지장학회), 보건대학원(특지장학회), 평통여성장학재단, 승희장학문화재단, 삼안코퍼레이션(주), 광산장학회, 영양군, 제천시장학회, 능성구씨(서울시총회), 은성코퍼레이션(주), 덕명학술문화재단, 달성장학재단, KBS강태원복지재단, 농림부(여성정책과), 청소년을위한나눔문화재단, 덕영재단, 일맥장학회, 서울특별시산업지원과(과학), 신양문화재단, 홀트아동복지회, 우인성특지장학회, 서울제주도민회장학회, 금샘장학회, 여수시, 여산장학회, 함평군, 정산장학(김해)재단, 한국석유공사, 옥림장학회, 김해장학회, 문경시, 완주군, 안산시, 우당장학회, 포항시장학회, 조비·경농장학재단, 돈암장학회, 인터베트코리아(주), 라운백장학회, 서울특별시산업지원과(인문학), 장학순특지, 전기공사공제조합장학회, 종로구장학회, 단양장학회, 가현신도리코재단, 농촌희망재단, 라성정형기장학재단, 제주시, 경상남도, 일반발전기금, 특정발전기금, 조수발전기금, 한국과학재단(이공계), 한국과학재단(저소득)

## 제 2 절 국내외 학생 교류 확대

### 1) 국내 대학 간 학생 교류

서울대학교 학칙 제73조는 “학생이 국내외의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과정별 이수 학점의 2분의 1 이내에서 이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는 이러한 학칙을 근거로 국내 대학들과 학문적·인적 교류를 도모하고자 대학 간 학점 상호 인정 제도를 확대하고자 노력하였다. 그 일환으로 1997년 5월 31일에 규칙 제1051호로 ‘서울대학교국내대학과의학생교류,수학및학점인정에관한규정’을 제정하였고, 그후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현재 서울대학교 학생으로서 타 대학에서 수학하려는 자는 학칙에 의해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로, 전 학기 성적 평점 평균이 학사과정은 2.7 이상, 대학원과정은 3.3 이상이어야 한다. 학기당 취득 학점은 서울대학교 취득 학점을 포함하여 학사과정은 17학점, 대학원과정은 12학점 이내이며, 계절 학기는 9학점 이내이다. 수학 기간은 정규 학기의 경우 학사과정은 4개 학기, 대학원과정은 2개 학기 이내, 석·박사 통합 과정은 4개 학기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계절 학기 수학 기간은 제한하지 않는다. 타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 성적은 취득한 성적 그대로 학적부에 등재하되, 평점 평균 산출 시는 산입하지 아니하며, 다만 교육 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공동 학위를 수여하는 대학에서 수학한 경우에만 학점과 평점을 인정하고 있다.

국내 대학 간 학점 상호 인정제는 시행 첫해인 1997학년도에, 학사과정은 계절 학기에만, 대학원과정은 정규 학기와 계절 학기 모두 시행하였다. 그리고 1998학년도부터 학사과정도 정규 학기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다. 1997학년도 서울대생의 타대 강의 수강은 여름 방학 기간에 6개 대학에서 15명이, 겨울 방학 기간에 7개 대학에서 123명이 수학하는 것에 그쳤다. 같은 기간 타대생이 서울대학교에서 수강한 것도 여름 방학 기간 8개 대학의 58명이 와서 수학한 정도였다. 그러나



그림 3-4-4 1997년 2월 24일 국립대학교간 학술교류연정 체결식 장면

〈표 3-4-8〉 국내 대학 간 학생 교류 상황

(단위: 명)

년도	수강 구분	서울대생 타교 수강	타교생 서울대학교 수강
1998	정규 학기	5	34
	여름 계절 학기	36	54
	겨울 계절 학기	309	-
	소계	350	88
1999	정규 학기	7	66
	여름 계절 학기	21	415
	겨울 계절 학기	283	-
	소계	311	481
2000	정규 학기	11	104
	여름 계절 학기	19	543
	겨울 계절 학기	429	-
	소계	459	647
2001	정규 학기	36	198
	여름 계절 학기	98	759
	겨울 계절 학기	487	-
	소계	622	957
2002	정규 학기	11	256
	여름 계절 학기	132	78
	겨울 계절 학기	465	-
	소계	608	334
2003	정규 학기	12	289
	여름 계절 학기	125	51
	겨울 계절 학기	624	-
	소계	761	340
2004	정규 학기	28	334
	여름 계절 학기	110	43
	겨울 계절 학기	612	-
	소계	750	377
2005	정규 학기	25	364
	여름 계절 학기	99	48
	겨울 계절 학기	803	-
	소계	927	412

출전: 교무처 제공자료

〈표 3-4-9〉 2006년 상반기 현재 국내 대학과의 학생교환협정 체결 현황

연번	대학명	학생교환협정 체결 일자
1	전남대학교	1997. 2. 24
2	전북대학교	1997. 2. 24
3	제주대학교	1997. 2. 24
4	충남대학교	1997. 2. 24
5	충북대학교	1997. 2. 24
6	강원대학교	1997. 2. 24
7	경북대학교	1997. 2. 24
8	경상대학교	1997. 2. 24
9	부산대학교	1997. 2. 24
1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0. 6. 9
11	한국외국어대학교	2002. 1. 16
12	국방대학교	2003. 1. 8
13	울산대학교	2004. 7. 16
14	고려대학교(대학원)	2003. 8. 25(2004. 9. 13)
15	계명대학교	2005. 3. 1
16	중앙대학교	2006. 4. 20
17	동국대학교	2006. 4. 20

그 다음해부터 서울대생의 타 학교 수강과 타대생의 서울대학교 수강 모두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앞의 〈표 3-4-8〉을 보면 서울대생의 타대 수강은 정규 학기보다 방학 기간 중 계절 학기에, 특히 겨울 계절 학기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는 서울대학교에 겨울 계절 학기가 없기 때문으로, 결국 국내 대학 간 학점 교류 제도는 진정한 인적·학술적 제도로 활용되기보다 주로 모자라는 학점을 보충하기 위한 제도로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계절 학기를 사립대학에서 수강할 경우 그곳 수업료가 서울대학교 수업료에 비해 너무 비싸다는 불만도 있다. 그렇지만 짧은 기간이나마 다른 환경에서, 다른 학생들과, 공부해 본 경험은 학생들의 시각과 경험을 넓히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서울대학교는 〈표 3-4-9〉에 보이는 것처럼 국내 대학과 학생 교환 협정 체결을 늘리고 있는바, 앞으로 서울대학교와 국내 대학의 교류는 양적·질적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 2) 외국 대학과의 학생 교류

1986년 이전 서울대학교의 국제 학술 교류는 개별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교수 해외 파견과 학생들의 해외 유학이 주를 이루었지, 대학 차원의 공식적인 국제 교류는 없었다. 1980년대 후반 외국 대학에서 교류를 희망하는 문의가 쇄도하였지만, 이에 제대로 대처하지도 못하였다. 국제 학술 교류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제도적 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다.

1986년에 나온 「서울대학교 발전장기계획」(1987~2001년)은 서울대학교가 ‘국내 제일’에서 ‘세계 일류’로 도약할 것을 목표로 제기하였고, 이해 11월 서울대학교는 개교 이래 처음으로 외국 대학과 맺는 학술 교류 협정을 캘리포니아대학교 L.A.분교(U.C.L.A.)와 체결하였다. 그리고 1988년 7월에 국제 교류 활성화를 담당할 자문 기구로 국제교류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국제교류위원회는 외국 대학에서 들어오는 교류 요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권고하는 자문 기관의 역할을 하였다. 이 위원회는 대학 본부에 국제 교류를 위한 재정적 원천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그 결과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등에서 국제 교류를 위한 자원 마련을 위한 협조를 받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제도적·재정적 차원의 개선이 이루어진 후 국제 학술 교류는 진전을 이루어, 1990년대 중반까지 호주, 헝가리, 러시아, 스웨덴, 일본, 프랑스, 캐나다 등 외국 대학들과 연쇄적으로 학술 교류 일반 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국제 교류에 대한 구상과 실상, 특히 학생 교류는 아직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는 형편이었다.

서울대학교가 국제 교류를 본격적으로 구상하기 시작한 것은 1995년에 작성된 「서울대학교 2000년대 미래상」이었다.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고 김영삼 정부가 세계화·국제화를 강조하는 시대 분위기 속에서, 「서울대학교 2000년대 미래상」은 주요 10대 전략의 하나로 ‘국제 교류의 활성화’를 내걸었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안으로 국제 교류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전담 기구를 신설하여 그때까지 분산 운영되거나 미비했던 여러 관련 업무들을 전담하게 할 것과 외국 학생의 서울대학교 유학과 서울대학교 학생의 해외 유학을 촉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1995년 10월에는 일본 도쿄대학교와 최초로 학생 교류 협정을 체결하여 외국 대학과 학생 교류를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

1996년 5월, 대학 당국은 본부 기획실 산하에 비법정 기구로 국제교류센터를 설립하여, 체계적인 국제 교류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97년 5월 ‘외국대학과의 학생교류·수학및학점인정에관한규정’을 제정하여, 외국 대학과 학생 교류를 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본격적인 박차를 가하였다.

1998년의 「서울대학교 장기발전구상」은 국제 교류에 대한 구상을 좀 더 구체화하였다. 이 구상은 서울대학교가 지향하는 ‘세계의 대학’은 국제화를 통해 실현할 수 있다고 보고, “선진국의 학문을 수동적으로 수용해 오던 일방향적 교류에서 벗어나, 전 세계와 학문적 성과를 주고받는 쌍방향적 교류를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 당시 상황에 대해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서울대생의 외국 대학 수학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실제 1997년 현재 서울대학교에는 51개 국가에서 온 365명의 학생이 수학 중이어서, 전체 학생 중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1.5%에 불과하였다.

학생 교류도 대단히 미약해서 당시 서울대학교와 학술 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 대학은 25개 대학이었으나, 1명이라도 학생 교류가 이루어진 대학은 12개 대학에 불과하였고, 교류 학생 수도 서울대생이 18명, 상대 대학의 대학생이 6명에 지나지 않았다(〈표 3-4-10〉 참조). 당시 서울대학교 재학생 수가 29,089명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 이는 지극히 적은 숫자였다.

이에 서울대학교 장기발전구상은 외국인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기숙사 시설을 우선 배정하는 등 다양한 지원 체제를 마련하여, 2030년에 학사과정 학생은

〈표 3-4-10〉 1997년 외국 대학과의 학생 교류 현황

(단위: 명)

대학	학생 교류	
	서울대	상대 대학
스토니브룩뉴욕주립대학	2	1
워싱턴대학	1	1
도쿄대학	1	-
히토츠바시대학	2	-
시드니대학	1	-
호주국립대학	1	-
옥스퍼드대학	1	1
연변대학	-	2
북경대학	1	-
스톡홀름대학	-	1
브리티시콜롬비아대학	5	-
헬싱키대학	3	-
계	18	6

출전: 서울대학교 발전자문위원회, 1998 『서울대학교 장기발전구상』, 52쪽.

5%, 대학원 학생은 25%로 외국인 유학생 비율을 높일 것을 촉구하였다. 또 서울대생의 외국 대학 수학도 연간 전체 학생의 1%에 해당하는 300명의 학생이 외국 대학에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할 것을 목표로 잡았다.

기획실 산하에 있던 국제교류센터는 2000년 12월에 독립하여 대외교류처로 승격하였고, 2001년 9월에는 학칙 개정을 통하여 학칙상의 공식 기구인 대외협력본부로 확대·개편하였다. 이후 대외협력본부는 서울대학교가 '세계 수준의 종합 연구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대학의 국제 교류 협력, 국제 교육 지원, 외국인 학생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학칙에서 규정한 대외 협력 본부의 직무는 아래와 같다.

1. 대외 교류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 및 협정 체결.
2. 교생의 국외 유학·연수 및 교류 지원.
3. 외국인 학생과 재외 국민 모국 수학생의 지원.
4. 학위과정 학생의 수학 허가 및 지원.
5. 외국인 학생의 학사 지도 및 상담.
6. 외국인에 대한 각종 홍보 및 안내.
7. 외국인 학생 장학금 및 후생 복지 업무.
8. 외국 대학의 자료 수집 및 관리.
9. 대외교류위원회 운영.
10. 국내외 학술 교류 및 협정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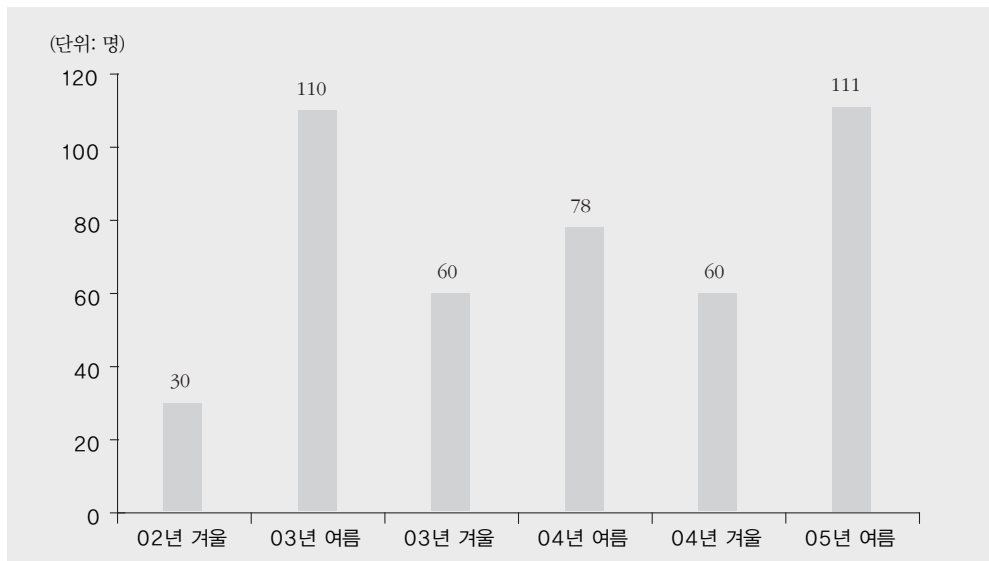


그림 3-4-5 학생 단기 해외 연수 사업 실적. 출처: 『2002~2006 비전과 변화』, 46쪽.

## 11. 기타 대외 교류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2002학년도를 기점으로 서울대학교 국제 교류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다. 교환 학생 제도 외에 별다른 국제 교류 프로그램이 없던 상황에서 이해부터 학생 단기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방학 중 4주 이상의 연수 기간 동안 학생들에게 수강 및 자료 수집 활동비로 150~200만 원을 지원한다. 또 대학원생의 연구 여건 개선 및 국제적 협력 기반 조성과 국제 공동 학위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2002년부터는 서울대학교 발전기금의 지원으로 대학원생 장기 해외 연수 프로그램도 마련하였다. 이 제도는 1~2학기의 연수 기간에 월 1,000달러의 체재비와 왕복 항공료를 지원한다.

하지만 2003년에 나온 「서울대학교 장기발전계획」(2002~2011년)은 서울대학교가 국제 교류의 목표와 당위성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를 바탕으로 가시적인 실적을 축적하였으나, 아직은 당위적 목표와 현실 간에 많은 괴리가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대외협력 본부를 설치하긴 했으나 전문성을 갖춘 직원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으며, 서서히 늘어나는 학술 교류 협정도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이라고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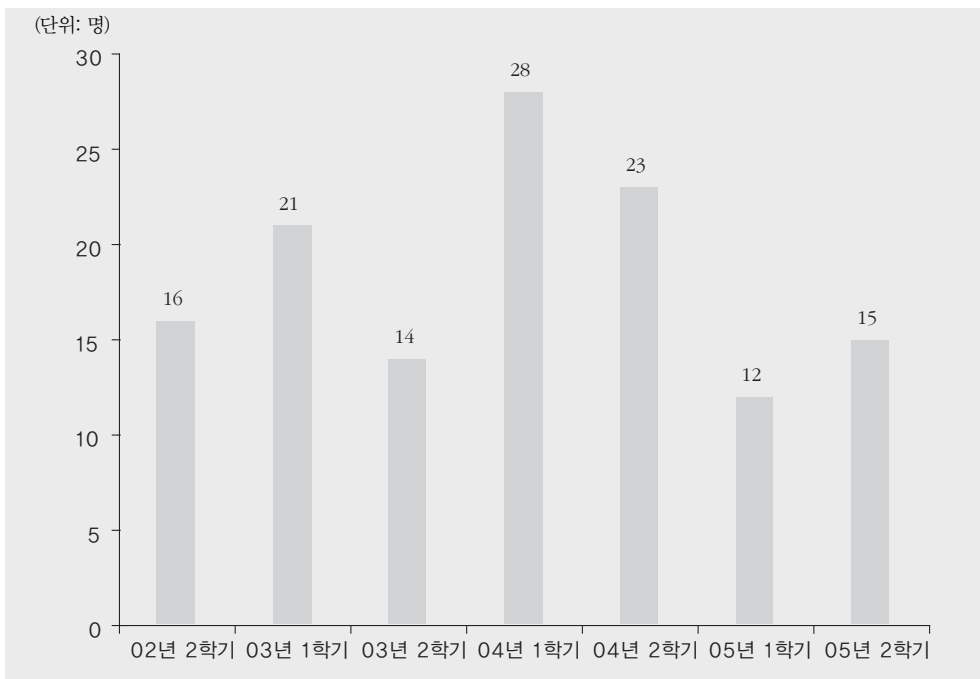


그림 3-4-6 대학원생 장기 해외 연수 현황. 출처: 『2002~2006 비전과 변화』, 46쪽.



실제 외국 대학과의 학생 교류 특히 교환 학생 파견은 아주 조금씩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50명 내외 수준에 머물렀다. 1998학년도에는 7개국 11개 대학에 20명, 1999학년도에는 14개국 24개 대학에 42명, 2000학년도에는 9개국 18개 대학에 37명, 2001학년도에는 13개국 28개 대학에 63명, 2002년에는 8개국 15개 대학에 35명을 파견하였으며, 2003년에는 11개 국 23개 대학에 50명, 2004년에는 13개국 31개 대학에 54명을 파견하는 것에 그쳤다. 이는 폭발적으로 증가한 학생들의 국제 교류 욕구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치였다.

그런데 2005년을 기점으로 서울대학교의 국제 교류는 다시 한번 크게 성장한다. 2005년의 교환 학생 선발 인원이 전해에 비해 3배 이상 늘어, 15개국 36개 대학에 총 125명의 교환 학생을 파견한 것이다. 외국에서도 80여 명의 학생이 서울대학교에 수학하러 왔다.

이는 최근 외국 대학과 맺은 학술 교류 및 학생 교류 협정이 대폭 증가하였기에 가능하였다. 활발한 국제 교류를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인 학술 교류 협정은 최근 몇 년 사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2001년 11월 말 현재 18개국 49개 대학에서 2006년 6월에는 32개국 102개 대학으로 늘어났다. 2006년 가을 학기 현재 서울대학교에서 수학하는 외국 학생도 51개 국가에서 온 1,161명으로, 1997년에 비해 그 수가 3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서울대학교의 국제 교류, 특히 학생 교류는 앞으로 더욱 확대해야 할 상황이다. 이는 53개 국가 483개 대학과 교류 협정을 맺어, 매년 300명 이상의 교환 학생을 해외에 파견하고, 69개 국가에서 3,500명의 학생이 와서 공부하는 연세대학교(2006년 현재)와 비교해 볼 때 더욱 잘 드러난다. 국제화·정보화의 추세 속에 더욱 더 많은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해외에서 수학할 기회를 갖길 원하지만, 현재 교환 학생을 비롯한 서울대학교의 해외 학생 교류 제도는 이들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학생들 또한 좀 더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최근 학생들은 영어권 대학만 선호하여 교환 학생 모집 결과 영어권 대학에만 학생들이 몰리고, 그외 언어권의 대학에는 지원자가 없어 파견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물론 현 세계정세에서 영어의 중요성은 부인할 수 없으나, 시야를 넓혀 좀 더 다양한 문화권에 관심을 가지는 자세가 아쉽다.

〈표 3-4-11〉 2005년 교환 학생 파견 현황

국가	대학	인원(명)
미국	George Washington Univ.	1
	Univ. of Washington	2
	N.Y. Stony Brook	3
	Univ. of Northern Iowa	10
캐나다	Simon Fraser University	4
	Univ. of British Columbia	21
	Univ. of Toronto	5
호주	Australian National Univ.	1
	Griffith Univ.	2
	Univ. of Melbourne	2
	Univ. of Sydney	2
	Univ. of New South Wales	3
뉴질랜드	Univ. of Auckland	17
싱가포르	National Univ. of Singapore	3
스웨덴	Univ. of Stockholm	2
핀란드	Univ. of Helsinki	1
네덜란드	Leiden Univ.	2
홍콩	Univ. of HongKong	5
	Chinese Univ. of HK	3
덴마크	Denmark Tech Univ.	1
독일	Freie Univ. Berlin	1
	Humbolt Univ.	1
	Univ. of Bonn	2
	Lugwig-Max Univ.	1
프랑스	Univ. of Paris-Sorbonne(Paris IV)	2
멕시코	Univ. of Guadalajara	8
중국	Fudan Univ.	1
일본	Keio Univ.	2
	Kyoto Univ.	2
	Univ. of Tokyo	1
	Waseda Univ.	1
	Kyushu Univ.	4
	Hokkaido Univ.	4
	Hitotbashi Univ.	2
	Tohoku Univ.	2
	Osaka University	1
총계	36	125

〈표 3-4-12〉 국제학술교류 협정 체결 현황

연번	대학명	국가명	일반 협정 체결 일자
1	U.C.L.A	미국	1986.11.10
2	The University of Sydney	호주	1989.9.27
3	The Technical University of Budapest	헝가리	1990.1.25
4	Leningrad Scientific Center	러시아	1990.8.2
5	Stockholm University	스웨덴	1990.8.3
6	The University of Tokyo	일본	1990.8.17
7	Kyoto University	일본	1991.5.21
8	L'Ecole des Hautes Etudes en Sciences Sociales	프랑스	1991.5.27
9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캐나다	1991.6.3
10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Stony Brook	미국	1991.9.1
11	Th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호주	1991.11.27
12	Griffith University	호주	1991.12.6
13	Yanbian University	중국	1992.7.25
14	Peking University	중국	1993.11.1
15	The University of Newcastle upon Tyne	영국	1993.11.9
16	Hitotsubashi University	일본	1994.2.25
17	The University of Oxford	영국	1994.7.19
18	The University of Auckland	뉴질랜드	1994.9.14
19	Freie Universitat Berlin	독일	1994.10.26
20	The University of Helsinki	핀란드	1995.6.15
21	University of Washington	미국	1996.7.31
22	The University of Minnesota	미국	1996.12.2
23	Tokyo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일본	1996.12.30
24	Ritsumeikan University	일본	1997.1.24
25	The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호주	1997.2.3
26	Hokkaido University	일본	1997.10.1
27	The University of Sheffield	영국	1997.10.6
28	The University of Guadalajara	멕시코	1997.10.27
29	Colorado State University	미국	1997.11.19
30	University of Bonn	독일	1997.12.4
31	Simon Fraser University	캐나다	1998.3.24
32	The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싱가폴	1998.4.8
33	L'Universite de Paris-Sorbonne	프랑스	1998.6.10
34	National Taiwan University	대만	1998.6.24

〈표 3-4-12〉 계속

연번	대학명	국가명	일반 협정 체결 일자
35	Chulalongkorn University	태국	1998.6.25
36	Waseda University	일본	1998.6.25
37	Tohoku University	일본	1998.7.8
38	Washington State University	미국	1999.12.31
39	Cairo University	이집트	2000.1.18
40	Humboldt-Universität Zu Berlin	독일	2000.5.12
41	M.V. Lomonosov Moscow State University	러시아	2000.5.29
42	University of Missouri	미국	2000.5.29
43	Keio University	일본	2000.9.5
44	Osaka University	일본	2000.10.20
45	University of Pittsburgh	미국	2000.12.6
46	L'Ecole Nationale Supérieure des Mines	프랑스	2001.7.12
47	Kyushu University	일본	2001.8.21
48	Ludwig Maximilians Universität München	독일	2001.10.8
49	Shonan Institute of Technology	일본	2001.11.27
50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미국	2002.1.5
51	The University of Melbourne	호주	2002.5.17
52	Fudan University	중국	2002.6.10
53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미국	2002.6.16
54	Shanghai Jiao Tong University	중국	2002.6.18
55	National University of Mongolia	몽골	2002.10.24
56	The University of Alberta	캐나다	2003.11.20
57	Sripatum University	태국	2004.1.7
58	University of Indonesia	인도네시아	2004.1.26
59	University of Malaya	말레이시아	2004.1.27
60	Thammasat University	태국	2004.1.28
61	Vietnam National University, Hanoi	베트남	2004.1.29
62	Vietnam National University, Ho Chi Minh	베트남	2004.1.30
63	Universitat Autònoma de Barcelona	스페인	2004.3.4
64	Vanderbilt University	미국	2004.3.19
65	Yale University	미국	2004.3.31
66	Central University for Nationalities	중국	2004.5.11
67	Instituto Tecnológico y de Estudios Superiores de Monterrey	멕시코	2004.6.17
68	University of Chile	칠레	2004.6.25

〈표 3-4-12〉 계속

연번	대학명	국가명	일반 협정 체결 일자
69	Yanbian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중국	2004.7.14
70	Far Eastern National University	러시아	2004.10.21
71	University of Toronto	캐나다	2004.12.27
72	Technical University of Denmark	덴마크	2005.1.27
73	Universiteit Leiden	네덜란드	2005.1.28
74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홍콩	2005.2.4
75	University of Hong Kong	홍콩	2005.2.15
76	University of Vienna	오스트리아	2005.4.6
77	Victoria University of Wellington	뉴질랜드	2005.4.12
78	Renmin University	중국	2005.5.9
79	Rice University	미국	2005.7.4
80	University of Northern Iowa	미국	2005.7.19
81	Ateneo De Manila University	필리핀	2005.7.22
82	University of Manchester	영국	2005.7.25
83	University of Santo Tomas	필리핀	2005.9.2
84	Johannes Kepler University of Linz	오스트리아	2005.9.23
85	Ecole Polytechnique	프랑스	2005.10.13
86	National Cheng Kung University	대만	2005.10.18
87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Diliman	필리핀	2005.10.24
88	Uppsala University	스웨덴	2005.10.24
89	The City University, London	영국	2005.11.3
90	Saint-Petersburg State Univeristy	러시아	2005.11.8
91	Technische University Darmstadt	독일	2005.11.18
92	Aoyama Gakuin University	일본	2005.12.7
93	Mongolian University of Sciences and Technology	몽골	2005.12.7
94	The University of Oklahoma	미국	2005.12.22
95	University of Sao Paulo	브라질	2006.1.9
96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미국	2006.1.24
97	Sciences Po	프랑스	2006.1.30
98	Princeton University	미국	2006.1.31
99	Nagoya University	일본	2006.2.28
100	Kazakh National Pedagogical University	카자흐스탄	2006.2.28
101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중국	2006.3.8
102	University of Economics, Prague	체코	2006.3.27



제 4 부  
연구





## 제1장 연구 활동의 흐름

대학은 학문연구 활동을 통해 창조적 지식을 생산하고 교육을 통해 우수한 학문 후속 세대를 양성하며, 국가와 사회가 요구하는 지식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대학의 3대 기능을 교육, 연구, 봉사라고 하지만, 지난 60년 동안 한국사회에서 ‘연구’가 대학의 주요 기능으로 정착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았다. 해방 이후 1960년대까지 대학 연구를 지원할 국가적·사회적 여력이 부족했고, 1980년대까지 고등교육이 팽창하면서 대학의 중심적 기능이 교육에 있었다. 1980년대 말부터 본교는 학문 연구 중심의 대학원 중심 대학을 이상으로 삼고 세계적 수준의 일류 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 장은 서울대학교 연구 활동의 주요 흐름을 시기별로 살펴보았다. 각 절의 시기와 내용을 간략히 보면, 우선 1절은 해방 이후부터 한국전쟁기, 전후 복구 기간까지(1946~1962년)를 다루었다. 해방 이후 본교 교수들은 새로운 학문연구 전통을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으나, 좌우 대립과 분단이라는 정치적 혼란 속에서 이를 실현하기 어려웠다. 또 한국전쟁으로 대학 교육이 거의 중단상태에 처했으며 대학 시설 파손 역시 심각했다. 그러나 1952년 부산으로 임시 피난하면서 본교 교수와 학생들은 학문연구 열정에 다시 박차를 가하고, 1953년 서울로 돌아온 후 미네소타 원조로 전후 복구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였다.

2절은 미네소타 원조가 완료되는 1962년부터 캠퍼스 종합화가 실현된 1975년까지를 포함한다. 1960년대 초 원조 자금 지원이 종료된 후 서울대학교는 자력으로 연구 환경을 조성해야하는 과제에 봉착했다. 국가의 대학지원 의지가 빈약한 상황에서 본교 교수들은 연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부를 설득하고, 학내에서는 관련 제도 변화를 통해 연구 활성화를 꾀하였다. 특히 캠퍼스 종합화 계획을 구상하는 60년대 말부터 70년대 초까지 대학 교육과 연구 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3절은 캠퍼스 종합화부터 1980년대 말까지로, 대학원 중심 대학론의 대두가 이 시기 주요한 특징이었다. 국가적으로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을 시행하고, 사회적으로 공업계 인력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본교는 ‘교수·연구요원 양성’이라는 임무를 요청받았다. 교수·연구요원 양성을 위해 정부와 본교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특성화하는 발전 전략을 택했고, 대학원 교육 개선을 위한 지원을 늘렸다. 그러나 1980년대 초 고등교육의 확대로 학부 학생 정원이 크게 늘면서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한 노력은 잠시 주춤하였다.

4절은 본교가 학문연구 중심의 대학원 중심 대학을 표방한 1980년대 말부터 시작한다.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까지 공간적으로 연구소 건물과 연구동 규모를 크게 늘리고, 제도적으로는 합리적 연구 지원 체제를 갖추었다. 1990년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흐름에 따라 본교는 국제 순위나 국제 경쟁력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겪었고, 또 학문간 정부 지원 격차가 커지며 기초 학문 고사론과 같은 위기의식이 발현되기도 했다. 그러나 본교는 이러한 대내외적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국제적 수준의 연구 중심 대학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그 결과 최근 들어 본교는 여러 지표에서 명실상부한 국제적 수준의 일류 대학 반열에 오른 것으로 인정받았다.

## 제1절 초창기 연구 상황(1946~1962년)

### 1) 해방 직후 학문 연구 분위기

해방 이후 서울대학교 교수들은 민족 대학의 새로운 학풍을 세우기 위해 강의와 연구 활동에 열정과 노력을 다하였다.



새로운 학풍을 세우려면 무엇보다 경성제국대학 때부터 내려온 학문 속의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 일이 시급했다. 일제 식민지기 말에 전시 동원 체제로 재편하면서 경성제국대학 강좌에 국가론, 통제 경제론, 경제 계획론, 배급론 등의 파시스트 학문이 더해졌다. 해방 이후 교수들은 전시 체제를 옹호하는 데 앞장섰던 이 강좌들을 폐지하여 일제가 강요한 학문을 추방하였다. 또한 학문의 일제 잔재를 대신할 이론으로 마르크스주의가 강력하게 대두한 것 역시 초기 학풍의 특징 가운데 하나였다. 사회 과학 분야에서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정치 경제학을 주로 강의했고, 인문 과학 분야에서 많은 교수와 학생이 진보적 학문 연구 방법으로 유물 변증법적 사관에 기울었다. 그러나 식민지 시기 동안 국내 학자들이 일본의 사회 과학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해방 직후 사회주의 이론의 유행은 완전히 새로운 현상이라고 볼 수 없었다. 일제 식민지기에 그랬듯이 사회주의 사상은 제국주의에 대한 대항 논리로서 설득력이 있어서 해방 직후에도 사회주의 사상을 따르는 경향이 강했다. 하지만 한국전쟁이 끝난 뒤 마르크스주의 서적을 금지하면서 이러한 학풍을 지속하기 어려웠다.

새로운 학풍의 두 번째 흐름으로 한국 문화와 역사, 동양학에 대한 탐구가 인문학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났다. 일제 식민지기 동안 국어나 국사를 공공연히 연구하는 일이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해방 뒤 이 분야를 연구하는 학문적 열정은 대단했다. 그 가운데 중요한 몇몇 예를 들어 보자. 김두현, 『민족 이론(民族理論)의 전망(展望)』, 『조선 가족 제도 연구(朝鮮家族制度研究)』(이후 『한국 가족 제도 연구』로 재출간), 김상기, 『동방 문화 교류사 논고(東方文化交流史論攷)』, 『중국 고대사 강요(中國古代史綱要)』, 방중현, 『고어 재과 사전(古語材料辭典)』, 『훈민정음 통사(訓民正音通史)』, 손진태, 『한국 민족 설화(韓國民族說話)의 연구(研究)』, 『조선 민족 문화(朝鮮民族文化)의 연구(研究)』, 유홍렬, 『조선 천주교회사(朝鮮天主教會史)』, 이병도, 『고려 시대(高麗時代)의 연구(研究)』, 이상백, 『조선 문화사 연구 논고(朝鮮文化史研究論攷)』, 『이조 건국(李朝建國)의 연구(研究)』, 이승녕, 『국어 음운론 연구(國語音韻論研究)』, 이인영, 『한국 만주 관계사(韓國滿洲關係史)의 연구(研究)』, 이희승, 『조선 어학 논고(朝鮮語學論考)』, 조운제, 『한국 시가(韓國詩歌)의 연구(研究)』, 『조선 시가 사강(朝鮮詩歌史綱)』, 고정옥, 『조선 민요 연구(朝鮮民謠研究)』 등이 모두 해방 직후에 출간되었다.

물론 이 가운데에는 일제 식민지기에 이미 간행하거나 연구한 것을 단행본으로 출판한 것도 많았지만 이러한 초창기 출판물들은 해방 직후 한국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한 이들의 연구 방법은 주로 실증주의를 따른 것으로, 전

후 급격하게 단절을 겪는 마르크스주의와 달리 본교의 핵심 학문으로 오랫동안 이어졌다.

해방 직후 학문에서 일제 잔재를 청산하려는 움직임은 인문학 및 사회 과학 분야뿐만 아니라 자연 과학 분야도 마찬가지였다. 자연 과학 분야 학자들은 서울대학교를 중심으로 모여 일제 식민지기 동안 억압받고 발전하지 못한 과학 기술을 진흥해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했다. 그러나 국립서울대학교설립안(이하 국대안)이 대표하는 급격한 제도 변화와 좌우 대립과 이념 갈등의 풍파 속에서 많은 학자들이 본교를 떠났다. 그중에 많은 수가 자연 과학 분야의 학자들이었다. 따라서 국대안 파동 이후 본교 이과 계통의 학문은 거의 진공 상태에 가까웠다. 남아 있는 몇몇 학자만으로 강의하는 것도 어려웠으며 연구는 거의 불가능했다.

해방과 분단이라는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도 본교 교수들은 새로운 학풍을 세우고 후진을 키우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다. 그러나 대학 체제가 기반을 채 잡기도 전인 1950년 한국전쟁이 시작되면서 초창기 교수와 학생들의 학문에 대한 열정은 실현될 수 없었다. 우선 많은 교수가 전쟁으로 해를 입거나 납북되었고 월북한 교수들도 있었다. 따라서 이 시기 본교의 학문 연구는 태동하기도 전에 침체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 2) 부산 시절의 어려움과 각 학회의 발족

한국전쟁 때문에 전국의 대학들이 전시연합대학 체제로 운영되는 동안 본교의 교육과 연구 활동은 거의 마비 상태였다. 1952년 5월 31일 전시연합대학을 해체하고 피난지 부산에 각 대학들이 정착하면서 교육 활동을 다시 정비하였다. 그러나 피난지에서 고등 교육의 여건은 너무나 열악했다. 전쟁 때문에 많은 인적 손실이 있었으며, 강의할 수 있는 시설도 겨우 가교사 정도밖에 없었다. 무엇보다도 책이나 자료를 구하는 것이 불가능했으며, 전쟁 중의 생계 문제를 해결하려고 겸직을 하는 교수들이 많았다. 또한 정치 혼란 속에서 이데올로기 대립이 강해 자유롭게 학문을 연구하는 것도 불가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세운 시책은 대학을 더욱 빈약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1952년 9월 새로운 시책으로 국립대학교를 각지에 증설하였고 여러 사립 학교도 규모를 키워 종합대학교로 승격하는 예가 많았다.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이러한 대학의 양적 증가는 상대적으로 질적 저하를 불러올 뿐이었다. 따라서 대학에서 연구와 교육 활

동은 극히 부진했다. 교수는 생활이 어려워 동분서주하면서 호구지책에 바빴고, 학생들도 고등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잃어버려서 온전한 대학 생활을 해 나갈 수 없었다.

전쟁의 이념적 성격은 학자들을 양 편으로 갈라놓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남과 북 각각의 학계 통합을 촉진하기도 했다. 전시연합대학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자 전시연합대학 학장을 겸임하던 최규남은 전시연합대학을 해체하면서 1952년 9월 서울대학교 부산 본교의 총장으로 부임했다. 최규남은 전쟁 이전에 단과대학들이 개별적으로 운영해 오던 학칙을 통일하고, 기성회비를 종합 경리화하는 등 여러 행정 제도를 통합하려고 노력했다.

최규남은 대학 제도를 통일함과 동시에 서울대학교를 중심으로 학계를 통합하려 했다. 비록 전시 피난 상황이지만 본교 교수와 학생들 역시 학계 정비의 필요성을 크게 자각했다. 최규남은 『참지식과 거짓지식』에서 부산시절 학문 연구에 대한 열정과 분위기를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부산에서의 우리의 살림살이는 물질면에는 빈곤했으나 정신적으로는 다정다감하였고 애국, 애교심이 어느 때보다도 드높았다고 회고한다. …… 외모로는 판자집에 불과한 가교사이지만 그 안에서의 교육활동은 착실하고 생산적이었다. 아침 일찍 등교하여 밤 늦게까지 사제동행의 절차탁마지도에 매진하였다고 회고한다. 당시 지방에서 시간으로 출강하는 선생 중에는 학교 숙직실에서 침식을 하면서 빠짐없이 강의하신 분도 있었다. 서울 시절의 휴강사태는 이미 옛일이오, 보충강의의 성행이 부산시절의 특색이라고 할까?(338-342쪽)

그러나 휴강이 별로 없고 보충 강의를 성행했다는 최규남의 회고와 달리 부산 시절에도 휴강 사태는 많았다. 더욱이 교육과 연구의 여러 여건은 해방 이후보다 부산 시절이 크게 나을 리 없었다. 그렇지만 부산 시절에는 적어도 국대안을 둘러싼 학자들 사이의 대립 같은 이념적 갈등은 많지 않았다. 한국 사회가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통합하는 동안 학계 역시 통합하였다. 이는 주요 학회들이 부산 시절에 활발히 발족한 사실을 보면 알 수 있다. 해방 후 약 10년 간 학회 창립 현황을 보여 주는 <표 4-1-1>을 참조하면, 해방 이후 5년보다 전쟁기 3년 동안 창립한 학회 수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표가 보여 주는 더욱 중요한 사실은 해방 후 5년간 발족한 학회는 주로 이공 계열과 의학 계열에 국한된 반면, 전쟁 기간에 이른바 문사철 계열의 학회들이 발족했다는 것이다.

〈표 4-1-1〉 해방 이후 약 10년 간 학회 창립 현황(1946~1955년)

연도	학회명	
1946	대한지리학회(1945년 9월 11일)	대한금속학회(4월 10일)
	대한화학회(7월 7일)	대한병리학회(10월)
	대한전자공학회(11월 1일)	
1947	대한지질학회(4월 10일)	대한약리학회(5월)
	대한외과학회(5월 10일)	대한전기학회(7월 9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1948	대한생화학회	
1949	대한치과의학회(5월 29일)	
1951	대한약학회(12월 16일)	대한토목학회(12월 23일)
1952	경북법학회(3월)	역사학회(4월 6일)
	대한조선학회(11월 9일)	한국경제학회(11월 30일)
	한국물리학회(12월 7일)	국어국문학회(12월 14일)
	대한한의학회(12월 16일)	
1953	한국교육학회(4월 4일)	대한예방의학회(5월 30일)
	한국철학회(10월 1일)	한국영미문학회(6월 7일)
	한국정치학회(10월 18일)	대한국제법학회(6월 16일)
	한국체육학회(10월 19일)	대한결핵학회(11월 6일)
	독일문학회(11월 24일)	
1954	한국영어영문학회	
1955	한국국어교육연구회(2월 25일)	역사교육연구회(7월 17일)
	한국수산학회(12월 24일)	

출전: 한국학술진흥재단, 1981년, 『학회 총람』, 『대학신문』(1952~1955년). 각 학회 홈페이지.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이유를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인문 과학과 사회 과학 계열 학문 분야가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크게 받으므로, 한국전쟁 이전 한국 사회를 휩쓴 좌우 이념 갈등 때문에 학계의 통합이 쉽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두 번째로 이공 계열의 경우 국대안을 거치는 동안 많은 학자가 월북했기 때문에 이념 갈등이 인문학 및 사회 과학 분야보다 일찍 정리되었다는 사실이다. 전쟁이라는 고통스러운 경험 위에서 부산이라는 한 지역에 전국의 대학이 모임으로써 각 학계가 통합을 추구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한편 한국전쟁 중에도 교수들의 해외 유학이 꾸준히 증가했다. 주로 미국이 원조한

교수 유학은 국제 교류를 통해 국내 학술 활동에 자극을 주어 학술계가 전후 침체기에서 벗어나 생동할 수 있게 해 주었다. 당시 유학 교수들의 학문적 성과는 대단히 큰 것이었고, 국내 학계만 아니라 국제 학술계에 공헌한 점도 적지 않았다. 그중에서도 특히 미국 국무부 초청으로 캘리포니아 주 미국 삼림연구소와 버클리 캘리포니아대학교(U.C. Berkeley)에서 약 2년 동안 임목육종에 관해 연구한 농과대학 현신규의 업적은 눈에 띄는 것이었다. 일제 식민지기와 해방 직후의 혼란기, 그리고 한국전쟁으로 이어진 시기에 우리의 교육과 학문은 그만큼 낙후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유능한 교수들을 외국에 파견하여 세계적 수준의 학문 동향을 익히고 연구하게 하는 일은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였다. 비록 양적으로 소수이긴 했으나 전쟁 기간에도 본교는 일부 교수들을 해외 파견하여 유학 기회를 줌으로써 그러한 과제를 실천하고자 했다.

### 3) 원조를 통한 교육·연구 기반 재건

한국전쟁이 끝나고 1953년 9월 15일이 되어서야 본교는 미8군사령부에게서 동승동 교사를 반환받았다. 그러나 전쟁으로 황폐해진 교사를 복구하려면 엄청난 재정이 필요했다. 당시의 국가 형편으로는 복구 비용을 지원할 능력이 없었다. 본교 교직원들은 모든 것을 정부에만 의존하지 않고 대학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했다. 우선 대학본부 안에 종합후원회와 재건기성회를 조직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대학 스스로 하는 재건 활동만으로는 역부족이었으며 외부의 지원이 무엇보다 긴급하게 필요했다.

당시 본교 총장 최규남은 여러 차례 문교부에서 시설 재건을 위한 자금을 얻고자 했다. 문교부 장관 김법린은 정부에서 지원할 재원은 없으나 미국 원조처에서 30만 달러를 문교부가 할당받았으니 우선 급한 것 몇 가지만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최규남에게 제의했다. 본래 이 자금은 서울에 있는 12개 대학 재건에 할당한 것이었다. 이에 최규남은



그림 4-1-1 미네소타 프로젝트 책임자 슈나이더(Arthur Schneider)와 공대·농대·의대 학장(1955년)(좌부터 공대학장 황영모, 농대학장 조백현, Arthur Schneider, 의대학장 이제구). 출전: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디지털 사진 자료관.

원조액을 균형 분배하는 방법보다 집중 투자하는 방법이 더욱 생산적이고 능률적이라고 주장했으나, 김법린은 서울대학교에만 특혜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최규남이 지속적으로 설득했고 마침내 문교부 장관의 승인을 얻었다. 그리하여 본교는 미국 원조 기관에서 30만 달러를 집중 지원받게 되었다. 최규남의 표현을 빌리면 당시 지원받은 30만 달러가 “씨앗”이 되어 미국 대외활동본부(FOA) 자금과 미네소타 프로젝트 원조 자금을 본교 재건 사업에 들여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미네소타 프로젝트 원조 자금으로 일부 단과대학은 재건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였다. 공과대학은 8년여에 걸친 미네소타 프로젝트 자금으로 한국전쟁 중 파손된 건물 19 곳을 수리하고 건물 6곳을 새로 지었으며 교육용 실험 기기를 많이 사들였다. 또한 신진 교수들을 미국에 보내 최신 학문을 배우게 하고, 선배 교수들도 단기 시찰 여행을 보내 미국의 공학 교육 실태를 파악하게 하여 공학 교육의 전반적인 수준을 향상하려 했다. 해외에 파견한 교수는 대부분 미네소타대학교에서 연수했고, 그곳에 적합한 학문 분야가 없는 경우에 MIT를 비롯한 다른 대학에서 연수했다. 이때 장기 연수를 허락받아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5명이었고, 단기 연수자 중에서 21명이 공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55년부터 1962년까지 이 원조 계획으로 파견한 교수 총 218명 중 64명이 공과대학 교수로, 전체 파견 교수의 29%를 차지했다. 공과대학 교수 64명을 직급별로 살펴보면 정교수 7명, 부교수 8명, 조교수 14명, 전임 강사 9명, 강사 9명, 조교 17명으로 신진 교수의 비중이 월등히 높았다.

농과대학은 미네소타 프로젝트 원조 자금으로 6,938평의 건물을 신축하고 925평의 건물을 복구하는 등 총 8,645평의 건물 시설을 갖추고, 30만 달러에 달하는 실험 기재와 도서를 사들였다. 또 당시 미네소타대학교가 조백현 학장을 6개월 단기 일정으로 초청한 것을 시작으로 중견 교수들은 6개월 혹은 1년 동안 시찰을 할 수 있었으며, 신진 교수들은 1년에서 3년 동안 미네소타대학교 대학원과정에 입학하여 수학했다. 그 결과 미네소타대학교의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교수가 6명, 석사학위를 취득한 교수가 31명이었다. 이 당시 유학 기간이 짧아 박사학위를 받지 못한 교수 가운데 12명은 귀국 후 수년 안에 재차 유학하여 미네소타대학교 또는 다른 외국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의과대학은 미네소타 프로젝트 원조 자금으로 기초 교실의 지붕을 비롯하여 수도와 도서관, 동물실, 향온실, 강당 등을 보수했다. 대학병원은 난방 설비와 전기 시설, 길, 취사장, 세탁소를 개수·개조하고, 간호학과는 새 교사와 기숙사를 지었다. 의과대학

기초의학교실과 임상의학교실은 원조 자금으로 교육 연구 기재를 더 많이 사들이고 보충하여 최신 시설을 고루 갖추었다. 기재 구입에 쓴 예산은 총 61만 달러로, 기초 부문에 23만 달러, 임상 부문에 38만 달러, 보건대학원에 1,365달러를 사용하였다. 이 밖에도 미네소타 프로젝트 원조 기금으로 도서실을 확장하고 도서와 학술지 등을 사 의과대학 학문 연구 재개에 큰 도움을 주었다. 의과대학은 간호학과를 포함하여 총 79명의 교수와 조교가 해외 유학을 했는데, 이 중 2~3명만 미국과 캐나다에 남고 나머지는 모두 귀국하여 서양 의학을 국내에 들여오는 데 기여했다.

미네소타 프로젝트 기금은 주로 공과대학, 농과대학, 의과대학을 지원했지만, 그 밖에 행정학 분야, 문리과대학 이학부 등 다른 분야에 대한 지원도 있었다. 행정학 분야는 국내에 필요한 행정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원을 신설하는 등 행정학 분야 자체의 발전을 목적으로 1959년부터 지원받았다. 이학부는 1959년 이학부가 의예과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는 명분으로 의예과 실험 실습 보강을 위해 20만 달러의 실험 기기 구입비를 지원받았다.

그러나 미네소타 프로젝트 기금이 본교의 균형 있는 연구 발전에 기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우선 이 기금은 근본적으로 전후 복구를 위한 것이고, 주 목적이 학사과정 교육 정상화였기 때문에 대학원 교육이나 전문 연구 환경을 조성할 여유는 없었다. 인사 교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자금을 건설용 기자재나 설비 구입 등 시설을 복구하고 신축하는 데 사용했다. 또 실험 기재를 대규모로 구입한 경험이 없던 교수들이 소규모 기재나 소모성 기기를 과다하게 구입하고 대규모 고가 장비 구매를 망설여 구입하지 못하는 등 시행착오 역시 적지 않았다. 또한 농학, 공학, 의학 세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인문학, 사회 과학, 자연 과학 등 기초 학문 발전이 늦어지는 불균형을 낳았다. 물론 국내의 물적 기반이 취약하고 복구 자금의 대부분을 외국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균형 발전은 애초부터 추진하기 어려웠다. 미국의 한국 원조 정책이 기본적으로 한국의 산업 시설 복구와 식량 자급자족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특정 단과대학만을 선택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미국에 지나치게 의존해 미국 이외 지역 학문을 배울 기회가 축소되면서 미국 일변도의 학문 경향이 나타난 것도 문제였다.

## 제2절 자립적 연구 기반 조성을 위한 진통(1962~1975년)

### 1) 1960년대 초반 연구 환경에 대한 논란

미네소타 프로젝트 기금으로 재건 사업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자 학내에 본연의 연구와 교육에 충실해야겠다는 새로운 의지와 열정이 생겨났다. 그러나 당시 본교는 겉으로 보기에 그럴듯한 면모를 회복하였으나 내실은 여전히 취약하였다. 1950년대 후반 교육원조 자금으로 기반 시설을 상당히 복구하였으나, 교육·연구 환경을 개선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문헌, 연구 장비, 연구비 모두 턱없이 모자라서 교수들의 연구 활동은 부진했다. 미네소타 프로젝트 원조 기금을 받은 농과대학, 공과대학, 의과대학까지 실험실이 부족하다고 호소했고, 원조를 받지 못한 단과대학의 상황은 더욱 열악했다.

1962년에 간행한 「서울대학교 실태 조사 보고서(파이롯트·스터디)」에 따르면, 앞으로 “새로운 시설을 많이 해야겠지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질문에 대부분의 교수가 연구 시설 개선을 최우선으로 답했다. 총 30개 응답 항목 중 우선순위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면, ① 실험실 증설 ② 위생 시설 개선 ③ 실험 기구 구비 ④ 자료 도구 구비 ⑤ 연구실 확충이었다.

또한 본교의 전후 재건이 외부의 힘으로 이루어진 점도 내실 확충의 걸림돌이었다. 본교 교수 가운데 많은 수가 1950년대에 미국에서 연수를 하거나 학위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본교는 이 시기 동안 강사와 교수가 부족했고 그에 따라 연구와 교육 여건 개선이 어려웠다. 또 1962년 6월로 미네소타 프로젝트 원조 계획이 끝나자 그 동안 외국 원조에 의지했던 본교는 불안과 걱정이 커졌다. 이는 미네소타 프로젝트 원조 계획이 끝났다는 것을 알리는 미국 측 사절단의 고별 기자 회견에서 질의한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미네소타 측은 서울대학교 발전을 자부하는 감회와 회상을 표명한 반면, 서울대학교 측은 후속 원조의 가능성을 타진하려는 조급함을 보인다. 아래 인용문은 미네소타 사절단 일행, 주한미국경제협조처(USOM) 관계자와 『대학신문』 기자들의 일문일답 내용 일부이다.

문: 이번의 「ICA·미네소타」계획이 끝난 후 이것에 대처할 어떤 특별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지?



답: 아직 아무 구체적인 계획도 서 있지 않다.

문: 지난 8년의 원조가 끝난 지금 사실상 대학은 외원을 받을 길이 완전히 막혔는데 앞으로 아무 계획이 없다면 곤란하지 않은가?

답: 그 문제에 대해선 「유송」 측에서 충분한 고려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 인적 자원의 훈련을 중심으로 한 다른 어떤 계획이 곧 서리라고는 믿지만 확실한 답변을 할 수는 없다. (『미네소타 사절단 고별 기자회견』, 『대학신문』 1962년 6월 28일자)

1960년대 초반 본교 연구 환경은 원조를 대체할 정부 지원이 미미한 상황에서 담보 상태에 있었고, 그에 따라 교수들은 지속적으로 정부에 연구비 증액을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는 연구비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하지 못하고 삭감과 증액을 반복함으로써 혼란을 더했다.

예를 들면 1964년 4월 본교 교수협의회는 교수 연구비가 거의 없어 연구 수행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지적하고 정부의 적절하고 과감한 대책을 촉구하였다. 같은 해 9월 추경 예산 편성에서 정부는 교수들에게 연구 수당(최고 3천 원, 최하 5백 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했고 이로써 1964년 10월부터 본교 교수 594명은 교수 3천 원, 부교수 2천5백 원, 조교수 2천3백 원, 전임 강사 2천 원을 매월 봉급 지급일에 받게 되었다. 그러나 바로 다음 해 예산에서 종전까지 지급하던 학술 연구 조성비(문교부 예산)와 학술 연구비(본교 예산)를 전액 삭감하였다. 이에 교수들은 종전 학술 연구 조성비와 학술 연구비도

〈표 4-1-2〉 1960년대 초반 본교 학술연구비

(단위: 건, 명, 원)

연도	1962	1963	1964
과제	31	20	17
인원	41	20	17
금액	2,045,000	1,724,000	1,675,000

출전: 「학술연구비·학술연구조성비 등 연구비 예산에서 모조리 삭감」, 『대학신문』 1964년 9월 14일자.

〈표 4-1-3〉 1960년대 초반 학술 연구 조성비

(단위: 건, 명, 원)

연도	1963	1964
과제	41	28
인원	49	30
금액	6,382,185	2,181,600

출전: 「학술연구비·학술연구조성비 등 연구비 예산에서 모조리 삭감」, 『대학신문』 1964년 9월 14일자.

교수진이 방대한 서울대학교에는 “새 밭의 피”에 불과하였는데, 이마저 한꺼번에 깎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처사라며 반발했다.

학술 연구비와 학술 연구 조성비는 사실 매년 삭감 일로에 있었다. <표 4-1-2>와 <표 4-1-3>은 본교 예산에서 책정하는 학술 연구비와 학술 연구 조성비 지급액으로, 1960년대 초반 전반적인 축소 경향을 보여 준다. 그 지급액은 과제당 거의 10만 원을 밑도는 적은 액수였고 5백여 명의 본교 교원 가운데 10% 미만의 인원에게 겨우 배당할 정도였다. 그렇지만 그나마 이러한 연구비의 혜택으로 매년 50여 건의 과제를 수행하였다. 학술 연구비와 학술 연구 조성비를 전액 삭감하고 대신 국립대학교 교수에게 매월 연구수당을 제공한 것은 대학 연구를 활성화시키기보다는 교수 봉급을 보조해 주는 정도였다.

물론 연구수당 지급으로 본교 교수들이 받은 총 연구비 규모는 증가했다. 그러나 지급에 따른 연구비 균등 분배 방식은 각 분야의 연구 성격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였다. 이공 계열의 경우 그 정도의 연구수당으로는 연구를 위한 첨단 실험 기기 구입은 꿈도 꾸기 어려웠다. 교수들의 첨단 이공학 연구는 불가능하더라도 학생들에 대한 실험 실습 교육은 제대로 해야 했지만, 현실은 이마저도 여의치 못했다. 1964년도 국고에 계상한 본교 실험 실습비 총액은 2백 5만 원으로 이는 학생 1인당 190원에 해당하는 매우 적은 액수였다. 이 정도의 실습비로는 실험 실습을 도저히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본교는 최소한의 실험 실습을 위해 학생들에게 실험 실습비를 별도로 거두었다. 하지만 실험 실습 환경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황은 쉽게 바뀌지 않았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했다.

1965년 3월 문리과대학 교수회는 본교 연구 여건 개선과 학문 연구 발전을 위해 대통령과 국민에게 호소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는 “현재까지 본 대학이 학술적 문화적 망각 지대에 방치됨으로써 정치적인 위험 지대로 되는 악순환을 우리는 이 이상 방관할 수 없다.”라고 천명하였다. 『대학신문』 1965년 3월 8일자에 게재된 성명서 전문은 아래와 같다.

#### 대학의 올바른 건설을 위하여 대통령과 국민에게 호소하는 성명서

一. 지성은 모든 위기를 사전에 방지함을 요구하며 공적 사적으로 위기의 합리적 해결이란 솔직히 대화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해방 후 우리는 20년 동안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본 대학이 올바른 최고학부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과감한 조치를 취해 주기를 끊임없이 고대하여 왔다. 그러나 현재까지 본 대학이 항상 학술적 문화적인 망각지대에 방

치됨으로써 정치적인 위험지대로 되는 악순환을 우리는 이 이상 방관할 수 없게 되었다.

올바른 고등학부란 두말할 것 없이 교수와 학생이 모두 학술연구와 문화활동에 골몰할 수 있는 기관을 뜻한다. 그러나 우리가 놓여있는 조건이란 교수가 평균 1만원 남짓한 월봉급과 월당 2천원 내외의 연구비만을 바탕으로 하여 연구와 이것을 통한 학생지도를 해야 하는 고행의 길뿐이다.

二. 우리는 현재 연구상의 이러한 악조건과 이 나라의 학술과 문화의 발전에 지도적 구실을 해야 하는 우리의 책임 사이의 엄청난 거리에 고민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책임은 국가와 납세자인 국민전체가 우리에게 위임한 것인 만큼 이 이상 우리가 본 대학의 암담한 실정에 관하여 침묵을 지키는 것은 오히려 국가와 국민 전체는 물론 학문과 문화 그 자체를 배신하는 결과가 될까 두려워한다.

三. 따라서 우리는 연구를 계속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조건으로서 월당 1만5천원 정도의 연구수당지급을 요구한다.

만일 이러한 최소한도의 연구조건마저 마련되지 못한다면 교수가 사명감을 잃게 됨은 물론 학생들도 공허한 강의에 실망하고 말 것이다. 최근 정부는 법관에게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활약할 수 있도록 연구조건을 이미 마련했다. 우리의 요구는 오직 이와 같은 과감하고 현명한 조치를 학술연구의 책임을 국가로부터 위임받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루 바빠 취해 달라는 것뿐이다.

四. 대학은 그 본질상 정치상황과의 거리를 지켜야 하며 항상 정부의 확고한 보호와 육성 의 뒷받침이 있어야 비로소 발전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의 문제는 오직 교육적 관점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교수가 전연 연구를 할 수 없는 조건에 방치되어 있고 연구를 통하여 학생을 지도하는 힘을 잃게 된 본 대학의 참상이 정치문제화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의 요구는 한시바빠 이루어져야 한다. 만일 본 대학의 암담한 실정이 그냥 계속 된다면 교수와 학생의 눈으로 볼 때 본 대학은 내용적으로는 항시 휴교 상태에 빠진 것과 흡사하게 될 것이나 이러한 상태로부터 이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이 나라에는 한 사람도 없다고 본다.

五. 현재까지 문교부장관과 서울대학총장은 우리의 참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행정적으로 가능한 거의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구조건에는 조금도 향상의 징조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학다운 대학의 건설을 교육적으로 이룩하기 위한 마지막 방법으로서 우리의 의욕을 납세자인 국민전체에 밝히는 동시에 이 위기의 합리적 해결을 위하여 대통령과 본 대학의 교수대표 수명이 한 자리에서 기탄없는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면담의 기회를 가지기를 간곡히 요청한다.

서기 1965년 3월 6일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교수회

이와 같이 1960년대 본교는 연구실, 연구 시설, 연구비, 실험 실습비 등 열악한 연구 환경을 정부 당국을 비롯한 여러 곳에 호소하여 이를 개선하려고 노력했다. 1960년대 중반 정부가 대학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를 지원하려고 마련한 여러 조치는 앞선 시기 본교 교수들의 노력과 열정을 반영한 것이었다. 그러나 1960년대 중후반 정부의 연구 지원 역시 충분하지도 연속적이지도 못했다.

## 2) 연구 활성화를 위한 대학 내부의 개선 노력

1960년대 본교 교수들은 정부의 지원이 미미하자 자체적으로 학술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매년도 기본 운영 계획을 세울 때마다 연구와 실험 교육 활성화를 주요 사업 목표로 선정했고 이를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을 모색했다. 연구 시설 확충과 서울대학교 학술연구재단 설립, 연구 교수 제도 시작이 대표적인 예이다.

연구소는 대학에서 학부와 대학원 다음으로 중요한 제3의 기관으로 전문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연구 인력을 체계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대학 학문 연구의 양적, 질적 발전에 기여한다. 그러나 1960년 이전까지 본교 연구소는 1946년 8월에 설립된 생약연구소(후에 천연물과학연구소로 바뀜)뿐이었다. 이에 각 학문 분야마다 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 노력했고 1961년 한국경제연구소(후에 경제연구소로 바뀜)를 시작으로 각종 연구소 설립을 본격화했다. 연구소 증설을 네 시기로 나누어 보면 1960년 이전에 1곳, 1961~1965년 13곳, 1966~1970년 6곳, 1971~1974년 3곳으로, 1960년대 전반기에 집중적으로 연구소를 설립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무렵에는 연구소 설립 붐과 더불어 연구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본격적으로 전개했다. 먼저 연구비 지원 여건을 개선하려고 1967년 재단법인 서울대학교 학술연구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학술 연구를 위한 연구비와 보조금, 장려금 지급, 학술 논문과 문화 발전을 위한 도서 출판, 학술 연구를 위한 외국인 초청 경비 지급 등의 사업을 담당하기 위해 출범했다. 재단 설립 기금은 서울대학교 후원회의 재산 잔액 16,059,294 원으로 마련했으며, 1968년부터 1974년까지 총 284건의 연구 과제에 약 9,300만 원의 연구비를 지급했다. 이는 연평균 약 40건에 약 1,500만 원가량을 지급한 셈이다. 학술재단의 연구비 지원이 본교 연구 환경을 크게 변화시키지는 못했지만 대학이 자체적으로 재단 기금을 운영하여 연구 환경을 개선하려 했다는 점은 의의가 있다.

또한 본교는 1967년부터 국내 최초로 연구 교수제를 실시했는데, 이는 연구 시간과 연구비가 부족한 교수들이 일정 기간만이라도 연구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제도였다. 연구 교수에게는 1년 간 강의 책임 시간을 면제하고 각종 연구비를 우선 지급하되 연구 기간이 끝나면 연구 보고서, 논문, 작품 등을 발표하거나 공개 학술 강연회를 열도록 했으며, 우수한 연구 결과를 거두었을 때에는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연구 교수의 선정 기준은 첫째 연구 실적이 현저하고 우리나라 학문 발전과 교육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선정 기준 제1호), 둘째 연구 실적이 있고 특히 연구에 열의가 있는 자로 조교수 이상의 대학 교원(선정 기준 제2호)으로 했다. 1967년에 제1호 해당자로 3명이 선정되어 서울대학교 학술연구재단에서 매월 3만 원씩 모두 108만 원을 받았다. 제2호 해당자로는 31명이 선정되어 그중 20명이 학술 연구 조성비, 정부 기관과 주한미 국경제협조처, 주요 기업체에서 지급하는 각종 연구비 786만 원을 지급받았다. 연구 교수의 선정 기준은 이후 매년 조금씩 바뀌었다.

연구 교수제를 의욕적으로 실시했으나 연구 기간이 짧고 연구비가 적으며 수혜자가 제한된 문제점이 있었고 그나마도 본교가 '종합10개년계획'에 따라 관악 캠퍼스로 이전하면서 잠시 시행을 보류했다. 1974년까지 연구 교수로 선정된 교수는 모두 234명으로 제1호 연구 교수가 25명, 제2호 연구 교수가 209명이었다. 연도별 인원은 <표 4-1-4>와 같은데, 그 수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였다.

이와 같은 여러 제도 개선과 맞물려 학술 연구 성과가 증가하였다. 사실 개교 이후 1950년대까지 교수들의 연구 업적은 그리 많지 않았다. 이는 정치적, 사회적 불안이라는 대외적 요인 때문이기도 했지만, 내부적으로도 학문 연구가 미성숙하고, 많은 교수가 외국에서 연수를 하는 등 학내 연구 역량이 크지 못했기 때문이다. 1960년대 접어들면서 해외로 유학 또는 연수를 갔던 교수들이 대거 귀국하고 교수 인원이 증가하면서 교수들의 연구 성과 역시 증가했다. 교수 인원은 1962년 285명에서 1969년 525명,

<표 4-1-4> 연구 교수 인원(1967~1974년)

(단위: 명)

연도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계
제1호	3	6	5	5	4	2	-	-	25
제2호	31	35	24	23	25	22	24	25	209
계	34	41	29	28	29	24	24	25	234

출전: 『서울대학교 30년사』, 360쪽.

1975년 784명으로 급증하였고 교수들의 총 연구 성과는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1962년 903건에서 1974년 1,750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1960년대 학문 연구의 중요한 질적 변화는 연구 분야가 세분화하고 전문화했다는 점이다. 이는 학술지 발간 경향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1946년 개교 이후 약 6년 간 본교에서 발간한 학술지는 전혀 없었고 1952년에 문리과대학이 최초의 학술지인 『문리대학보』를 간행하였다. 그 후 1954년에 본부가 『서울대학교 논문집』을 매년 한 차례씩 발간하였으며 본교 교수 논문을 모두 실었다. 또 논문집을 인문·사회계와 자연계로 나누어 두 권으로 간행했는데, 1958년에는 자연계 논문집을 의학계, 생농계, 이공계 등으로 분리하여 발간하였다.

1950년대 몇 종류에 불과하던 학술지는 1960년대에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다. 단과대학별로 논문집 간행을 활성화했고, 잇따른 연구소 설립에 따라 연구소 학술지 간행도 성행했다. 학술지는 일차적으로 연구 발표의 장이라는 의미가 있으므로, 학술지 발간의 양적, 질적 향상은 교수들의 연구 활동이 그만큼 활발해졌다는 것을 보여 준다(〈표 4-1-5〉, 〈표 4-1-6〉 참조).

물론 당시 교수들이 교내에서 간행한 학술지에만 연구 업적을 발표하지는 않았다. 1960년 이후 각종 학회와 그 분회를 설립하여 연구 발표 지면이 늘었으며, 해외 학술지에 연구 업적을 발표하는 사례도 늘었다. 그러나 교내 학술지의 증가는 나름대로 학내의 연구 열기를 반영하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또한 이 무렵 국제 학술 활동 역시 활발해졌다. 국제 학술 활동은 연구자들이 세계의

〈표 4-1-5〉 단과대학 간행 학술지(1950~1960년대)

학술지명	소속 대학	창간 연도	간행 구분
문리대 학보	문리과대학	1952	부정기
법학	법과대학	1959	연간
서울 의대 잡지	의과대학	1960	계간
행정 논총	행정대학원	1963	연간
학술 논문집	교육대학원	1964	연간
공중 보건	보건대학원	1964	반년간
연구 보고	공과대학	1965	연간
경영학 논문집	경영대학원	1968	부정기
논문집	교양과정부	1968	연간

출전: 『서울대학교 40년사』, 617쪽.

〈표 4-1-6〉 연구소 간행 학술지(1960년대)

학술지명	소속 연구소	창간 연도	간행 구분
업적집	생약연구소	1962	연간
학생 연구	학생생활연구소	1962	반년간
경상 논집	경영연구소	1962	연간
동아 문화	동아문화연구소	1963	연간
신문연구소 학보	신문연구소	1964	연간
법학	법학연구소	1964	반년간
어학 교육	어학연구소	1965	반년간
언어 교육	어학연구소	1969	연간
경영 논집	경영연구소	1967	계간
경영 실무	경영연구소	1967	계간

출전: 『서울대학교 40년사』, 618쪽.

〈표 4-1-7〉 교수 해외 파견 상황(1961~1975년)

(단위: 명)

연도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인원	21	33	28	34	41	146	155	114	125	153	203	182	217	220	253

출전: 『서울대학교 40년사』, 570-571쪽.

학문 경향과 연구 성과를 접함으로써 학문적 고립을 탈피하고 새로운 자극을 받아 국내의 학문을 발전케 하는 계기가 되었다. 교수의 국제 학술 활동 참여는 1951년 대학원장 윤일선이 리스본에서 열린 ‘세계 암학 연구회’에 참여한 것이 최초였다. 이후 교수들이 간헐적으로 국제 학술 대회에 참여했는데, 1960년까지 1년에 10명 이하에 불과했다. 본교 교수들의 국제 학술 활동 참여를 해외 파견 상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1965년까지 해외에 파견한 교수는 적었으나 1966년을 기점으로 그 수가 급증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표 4-1-7〉 참조).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구미 지역에 교수들을 파견했는데, 몇 명은 아시아에도 파견했다. 1961년 미국 16명, 영국, 캐나다, 독일로 각 1명을 파견하였다. 1965년에는 미국 22명, 영국 1명, 독일 3명, 이탈리아 3명, 대만 5명, 필리핀 1명 등으로 이전보다 파견 대상국의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1965년 이전까지는 교수 해외 파견국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었으나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일본이 미국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했다(〈표 4-1-8〉 참조).

〈표 4-1-8〉 교수 해외 파견 상황(1966~1975년)

(단위: 명)

연도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총 인원	146	155	114	125	153	203	182	217	220	253
미국	37	45	39	37	48	43	35	57	46	58
일본	70	52	39	38	55	76	64	76	73	84

출전: 『서울대학교 40년사』, 571쪽.

이상과 같이 본교는 1960년대에 연구 활성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다양한 노력을 했다.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할 획기적인 재정과 시설의 지원은 여전히 불충분하였으나 1960년대 말 캠퍼스 종합화 논의를 계기로 연구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기회를 모색했다.

### 3) 종합 발전 계획과 연구 여건 강화 모색

서울대학교는 개교 이래 오랜 기간 연립대학교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행정적으로는 종합대학교였으나 교육 시설이 각처에 분산되어 학문의 교류와 발전이 원활하지 못하였다. 이런 이유로 1959년 종합계획수립위원회를 발족하여 캠퍼스를 4곳의 중심 지역에 집중시켜 학문 연구를 활성화할 계획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러한 종합 발전 계획은 재정 여건이 충분치 못한 관계로 구상 차원에 그쳤다. 이후 1968년 정부가 서울대학교 종합화를 국가 정책의 일부로 받아들이면서 캠퍼스 종합화와 이를 통한 학문 연구 여건 개선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

1970년대 초반은 종합화를 앞둔 상황에서 서울대학교의 종합 발전을 위한 학내 의견 개진과 수렴이 활발하던 시기였다. 1970년대 초 학내에서 연구 여건 개선에 관해 나온 의견들은 크게 교수 연구 환경, 연구 기금과 연구비, 연구소, 연구 교수 제도 등의 항목이었다. 우선 교수 연구 환경에 관해서는 보수를 파격적으로 인상하여 개인별 연구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것, 교수가 담당하는 강의 시간을 주당 9(10)시간에서 연차적으로 6시간으로 감할 것을 논의하였다. 또한 각 교수별 단독 연구실과 제반 연구 보조 시설(난방기구 포함)의 마련과 조교의 배정도 언급하였다.

다음으로 대학 연구를 활성화하려면 연구비를 꾸준히 늘리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인식하여, 외국, 문교부, 과학기술처, 기타 정부 기관과 재단, 사업체 등에 연구비 증



액을 적극 요청하는 동시에 교내외 학술 재단의 연구 기금을 증액하자는 내용을 논의하였다.

세 번째로 학내 주요 연구 담당 기관인 연구소 기능을 활성화하자는 논의를 활발하게 하였다. 연구소의 설립 기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하여 연구소가 유명무실해지는 부작용을 방지하고 이미 설립한 연구소는 재평가를 통해 통합·정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기했다. 또 이를 위해 연구소 간의 조정과 연락을 긴밀히 할 수 있는 회의를 구성할 것 등을 요청했고 연구소에서 대학원생을 교육하고 교수 연구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요구했다.

네 번째로 연구 환경 개선에서 중요하게 논의된 점은 연구 교수 제도의 확대 실시였다. 연구 교수제를 확대해 궁극적으로 외국 대학처럼 5년에서 7년마다 1년 동안은 누구나 부담 없이 연구에 전력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1970년대 본교의 주요 기능 중 ‘연구’가 부각된 것은 연구 중심의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변화의 시작이었다. 종합 발전 계획을 마련하면서 교수의 연구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에 필요한 시설, 연구비, 인력을 충분히 제공하고, 연구 활동을 장려하는 제도를 확립,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대학 구성원의 공통 견해였다.

그러나 학내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종합 발전 계획을 완성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1968년 종합10개년계획을 마련한 이후, 1970년에 1차 보고서, 1971년에 2차, 3차 보고서가 나왔으나 이러한 보고서는 종합화 계획 구상을 더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청사진의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보고서가 만들어질 때마다 각 단과대학 또는 학문 분야의 이해관계 때문에 구체적 내용들이 상당히 달라지기도 했다. 이와 같이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1972년 1월 기획위원회는 종합화의 마스터플랜을 확정하였다. 마스터플랜 중 연구에 대한 부분을 아래에 발췌 인용했다.

## II. 연구

### 1. 연구의 중요성

대학 본연의 기능은 학문의 연구와 교육에 있고 대학의 가치는 거기서 행하여지는 연구와 교육의 내용과 그 성과여하에 달려 있음은 재론을 요치 않는다. 따라서 본 10개년계획의 성패는 앞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느냐에 좌우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 2. 연구기구

연구자의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개인연구와 다양한 분야를 포괄할 수 있는 공동연구를 가  
능케 하기 위하여는 연구기구가 필요하다. 본교에서는 두 가지의 연구기구를 둔다.

### ① 직할 연구소

연구소는 총장직속하에 두고 대학 자체가 그 연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정하여 설치하  
는 것으로 다음의 설치기준에 부합되어야 된다.

- ㉠ 그 연구가 특정학과 단독으로 수행하기는 어렵고 인접분야 내지 종합분야의 연구로서  
학문자체발전이나 사회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것
- ㉡ 그 연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분야별 연구자의 충분한 인적 구성이 가능한 것
- ㉢ 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

이상에 열거한 기준에 의하여 연구소를 설치할 때는 그 연구소에 참여할 교수들이 설립의  
취지, 필요성, 계획, 예산안, 인적구성, 성과 등을 명시한 설립계획서를 작성하여 연구담당  
부총장에게 제출하면 이를 교수평의원의 의결을 거쳐 학무회의의 승인으로 설립된다.

### ② 학내 연구소

이 연구소는 원장 또는 학장 직속하에 설립하고 이의 개설 및 폐쇄는 원장 또는 학장의 재  
량으로 한다.

이 연구소는 직할 연구소의 경우와 달리 대학 자체가 연구비 전액 또는 그의 유지비를 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소 자체가 (정부, 기업체 또는 외국 정부나 기업체로부터의) 상당한  
연구 지원을 얻어 운영 가능할 때 연구소에 참여할 교수들이 연구소의 설립계획서를 해당  
원장 또는 학장에게 제출하면 이를 대학 내 연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설립 승인하게 된다.

.....

## 5. 연구지원

대학에서의 연구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는 막대한 연구비와 현대적인 연구시설이  
필요하다.

### ① 연구비

연구비는 연구를 장려함에 선행되어야 하며 앞으로 연구비 확보는 대학 자체가 많은 부분  
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각적이고 능동적인 행정력을 발휘하여야 한다.

물론 연구관의 연례적인 유지비 내지 전문지 구입은 대학이 그 전부를 부담하고 나아가  
새로운 분야의 개발의 확보 또는 탐구를 위하여 대학이 결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 〈연구기금의 설치〉

10개년 종합화계획이 실행에 옮기는 때까지는 약 백억원의 기금이 필요하다. 이 연구기금  
의 활용방안은 교무담당부총장 주재하에서 해당위원회에서 심의한다.

## ② 연구시설

오늘날의 서울대학교의 연구시설은 그 후진성을 어느 외국에서도 찾기 힘들 정도이다. 이러한 연구시설을 이번 기회에 현대식으로 완전히 탈바꿈하기 위하여서는 대학 건물을 건설하는 이상의 배려와 투자가 필요하다.

새로운 건물에 현 장비를 가지고 간다면 아예 현 건물에 그냥 있음이 낫다고 보아야겠다.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마다 새로운 시설이 요구되며 그 시설의 운영까지도 검토 조사한 후에 다음 건물이 건립되도록 각별한 주의를 환기한다. 시설이란 10년 후까지를 바라볼 수 없고 계속 신진대사를 함으로써 현재 사용중인 기계도 성능이 우수하고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대체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함이 서울대학교가 세계의 무대에 나설 수 있는 핵심적인 요건이라 함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 〈연구시설의 종합화〉

종합캠퍼스가 됨으로 해서 얻어지는 큰 이익의 하나가 시설의 종합화이다.

### 〈전자계산소〉

교육지원시설 향에서 상술되었으나, 대학의 연구 및 사무 관리를 위하여 전자계산소가 시급히 필요하다.

### 〈공동준비실〉

이것은 영역별로 나누어 공작실, 가공실, 수선실, 분석실, 준비실 등이 필요하여 이는 영역별 연구시설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면밀히 검토해야 되리라 생각된다. 그리하여 각 연구실에는 그 연구에 필요한 기기만을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영역별 준비실에 비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시설위원회가 공동관리를 장려할 수도 있다.

## 6. 연구평가

대학에서 행하여진 모든 연구활동은 반드시 학술지를 통하여 공표되어야 한다.

(특정한 계약이 없는 한) 그 연구결과가 발표됨으로써 여러 사람의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평가는 곧 교수의 승진 내지 봉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반영되어야 한다.

(「종합화의 마스터플랜 - 교수 및 연구」, 『대학신문』 1972년 1월 10일자)

종합10개년계획의 마스터플랜을 통해 본교가 '연구'를 대학의 주요 기능으로 여겼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대학에서 연구를 담당할 핵심 기구가 연구소라고 생각하였으며, 연구소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다만 이 시기 여러 차례 작성된 종합 계획 보고서들에서 대학원 연구를 강조하는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사실 이후에도 한동안 대학원은 연구의 핵심 장소라기보다는 고급 학위자를 양성해 교수 인력을 공급하는 기관이라는 성격이 강하였다.

1970년대 초 대학원 운영의 최대 관심사는 ‘교육’ 활성화에 있었다. 본교가 1970년대 초에 간행한 「대학원교육의 강화책연구」와 「대학원교육운영 개선에 관한 연구」를 참조하면 당시 본교는 다음 다섯 가지 사항을 대학원이 추구해야 할 사명으로 삼았다.

첫째, 서울대학교의 학문연구는 국제학계의 일류급의 학문연구와 비견될 수 있는 것으로 발전시킨다. 이렇게 함으로써 더욱 많은 대학원 학생을 유치하여 급기야는 학생들의 외국 대학원에서의 유학 경향이 감소되고 서울대학교의 고급학위로서 만족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둘째, 서울대학교는 그 자체의 교수요원의 양성을 스스로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노력에 의해 해결할 것이며, 이는 주로 자체의 강화된 대학원교육을 통해 수행한다. 셋째, 서울대학교는 대학간의 분업의 장점을 지지하며 그 스스로는 학부교육보다는 대학원교육에 더욱 중점을 두어 발전시킨다. 따라서 인력과 재원을 대학원에 우선적으로 투입한다. 넷째, 서울대학교는 강화된 대학원교육을 통하여 국내외에 유능한 학자를 공급할 사명의 일부를 기꺼이 분담한다. 다섯째, 서울대학교는 급변하는 한국 경제구조의 변천에 따라 더욱 많은 전문직업인의 수요가 생기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동시에 국가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유사한 수요를 창조하고 계발하여야 하며 이런 사명을 강화된 대학원교육을 통해 완수한다.

이를 통해 당시 본교 대학원 규모가 작고 활동이 활발하지 않아 학자의 꿈을 품은 우수한 대학 졸업자가 본교 대학원에 진학하기보다는 해외 유학을 선호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사실 1960년대 우수 인력의 유출은 한국 사회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였다. 두 번째로 당시 대학원 미비는 교수와 연구 인력 재생산 체제의 미비를 의미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학원이 발전하지 못하여 대학 교수와 연구자로 본교 출신보다 선진 외국 대학 박사를 임용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세 번째로 본교 대학원은 국내 대학 교수를 양성하고 변화하는 사회와 산업계의 요구에 부응할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국가 사회적 요구를 받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교 대학원은 우선적으로 교육 내실화를 이루어야 했다.

1970년대 본교는 대학원 활성화, 그리고 이를 위한 우선 조치인 대학원 교육 정상화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 시기 대학원 교육에 관해 학내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된 배경 가운데 하나는 정부가 이공계 전문 대학원인 한국과학원을 별도로 설립할 계획을 발표한 것이었다.

…… 들리는 바에 의하면 현존 대학원의 실정이 너무나 못마땅하여 고급기술자 내지는 연구자의 양성을 맡길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구상을 하게 된 것이란 말도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동안 대학에 몸을 담고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며 지도해 온 우리로서 할 말이 없을 수 없다. 우리는 되묻고 싶다. 과연 그러면 대학에 대하여 충분한 지원을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질이 모자라고 우리가 게을러서 이 지경을 만들었다는 말인가 …… (장세희, 「시론: 기술계 대학원 신설계획에 대하여」, 『대학신문』 1970년 3월 30일자)

당시 문리과대학 교수 장세희는 이와 같이 발언하면서 국내 우수 인력을 가장 많이 확보한 서울대학교와 별도로 이공계 특수 대학원을 설립한다면, 우수한 본교 졸업자가 그곳에 진학하여 가뜰이나 어려운 대학원 운영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염려했다. 이제 당시 유명무실한 존재로 취급받던 대학원을 활성화하는 과제가 종합화 다음으로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 제 3 절 연구 활동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1975~1980년대 말)

#### 1) 캠퍼스 종합화와 대학원 제도 개혁

1960년대까지 서울대학교에서 대학원은 사실상 대학 교육의 사각 지대였다. 대학 연구 활성화에 반드시 필요한 3가지 요소를 연구 인력, 연구비, 연구 인프라로 분류할 때, 대학원의 부실은 이 중 연구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게 했다. 1960년대 본교 교수들이 열악한 연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 안팎으로 노력했다면 1970년대는 우수한 연구 인

〈표 4-1-9〉 대학원과 대학원 학생 추이(1965~1975년)

(단위: 개, 명)

연도	대학원 수			대학원 학생 수		
	국립	사립	계	석사	박사	계
1965	12	25	37	3,598	244	3,842
1970	21	43	64	6,122	518	6,640
1975	24	58	82	12,351	1,519	13,870

출전: 문교부, 『문교 통계 연보』 각년판에서 작성.

력을 교육하고 확보하기 위해 대학원 제도 개혁과 내실화를 꾀하였다.

한편 비슷한 시기에 문교부 역시 대학원 교육 강화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다. <표 4-1-9>를 보면 알 수 있듯이 1960년대 이후 국내 대학의 대학원 설립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이 당시 대학원은 대학원 교육에 대한 철학이나 전통을 전혀 형성하지 않은 상태였다. 학문과 사회가 발달하고 분화하면서 각 분야에서 고급 전문 지식이 필요하고 연구자를 양성하는 일이 시급해짐에 따라 대학원과 대학원에 진학하는 학생 수가 점차 증가했으나 대학원 교육의 질이 향상되지 못하고 부진했다. 이에 따라 대학원 제도의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전 국가적 과제로 제기되었다.

문교부는 1971년 11월 교육정책심의회에서 대학원 개선 방안을 연구하기로 하여 1974년 5월까지 관계 전문가에게 연구를 의뢰했고, 그 해 10월 전국 대학원장 협의회 주최로 전국 대학원 심포지엄을 열었다. 문교부는 이 결과를 토대로 1975년 6월 대학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고, 이에 대한 각 대학의 의견을 2차에 걸쳐 종합(본교는 1975년 7월 실험대학원안을 제안함), 수정·보완했다. 그런 다음 같은 해 12월에 교육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대학원교육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후 1976년 2월에 확정된 내용을 관계 법령(1976년 2월 23일 교육법 시행령 제121조 등)을 개정해 법제화하면서 각 대학에 개선 방안을 통보했다. 각 대학에 통보한 개선 방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1976년도부터 시행 또는 시행가능한 사항

- ① 대학원간의 협동강의 실시 및 학점 상호 인정
- ② 입학선발과정의 합리화 : 하위 학위과정의 성적반영, 지도교수 추천의견서 반영, 외국어 시험의 신축성있는 부과, 학사과정의 비동일계 전공자 입학허용, 전임교원의 재직교 대학원 입학 제한, 전문학문영역 학위과정 입학자의 해당 전문직 경력 인정
- ③ 대학원생의 유인체제 강화 : 장학금지급 확대(학부 대학원 간 장학금 비율 재조정), 대학원생의 유급조교로의 활용, 학생 연구설비의 개선(대학원생 공동연구실 설치 등)

#### 2. 준비기간을 필요로 하는 사항

- ① 학사과정과 연계 유지 : 교육과정의 조정(교육과정을 재편성하여 1977년부터 시행), 대학원과 학부 상부과정의 공동수강
- ②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의 연계체제를 통한 운영
- ③ 석·박사과정 간의 유기적 연속성 유지
- ④ 부전공제 강화 : 박사과정 필수화, 석사과정 권장사항
- ⑤ 이수과목의 정선과 심화 : 과목당 3학점제, 학과위주의 과정이수를 지양하고 과목중심으로 전환

## 3. 법령제정 또는 개정 후 실시할 사항

- ① 종합시험제도 및 논문심사제도 강화 : 석사과정에 종합시험제 신설, 1976년 석사과정 입학자와 1977년 박사과정 입학자에게 적용 예정
- ② 외국어 시험의 융통성 부여 : 1976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 ③ 야간제 및 계절제 수업강화 : 1976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서울대학교는 문교부 방안과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받으며 독자적인 대학원 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대학원 전문위원회는 1971년 12월 「대학원 교육의 강화책 연구」라는 보고서를 낸 뒤 1972년 11월에 「대학원 교육 운영 개선에 관한 연구」라는 보고서를 제출했고, 이후에도 계속 대학원 강화 방안을 연구하여 여러 차례 문교부에 건의했다.

위 보고서들은 종합화10개년계획과 함께 대학원 교육 강화를 추진하되 3기에 걸쳐 단계적으로 개선할 것을 건의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1기(1972~1973년)는 대학원이 대학원 내규 등 하위 법규를 개정하고 교육 운영과 일부 행정 체계를 개선해야 할 시기로 설정하였다. 2기(1974~1975년)는 대학본부와 대학원이 공동으로 서울대학교 학칙, 대학원 규정 등 법규 정비와 함께 대학원 행정 체계 수정, 전문 대학원의 관계 합리화, 입학 정원의 확충, 연구 조직 합리화 등을 추구해야 할 시기로, 3기(1976~1977년)는 문교부, 대학본부, 대학원이 공동으로 교육법과 그 시행령, 서울대학교설치령 등 법규 개정과 함께 대학원 행정과 본부 행정과의 관계 정비, 교수 통합 등을 매듭지어야 할 시기로 설정하였다.

이울러 전 시기를 통해 교육 여건 개선, 유인 체제의 강화, 교수 충원 등을 추진하려고 다음과 같은 중장기 계획을 건의했다. ① 도서 행정 10개년 계획 ② 실험 실습 시설 확충 ③ 대학원 학생 장학 5개년 계획 ④ 서울대학교 교수 충원 20개년 계획 ⑤ 교과 과정 통합 5개년 계획 ⑥ 교수 연구비 조성 10개년 계획 ⑦ 서울대학교 대학원 관계 법규 정비 5개년 계획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중장기 계획은 급속한 교육 개선보다는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고 점진적으로 노력해야 진정한 대학원 교육 강화가 가능하다는 교수들의 건의로 세워졌다.

대학원 교육 강화 논의와 함께 1971년부터 대학원이 서서히 모습을 바꾸었다. 대학원은 학사위원회를 설치하고(1971년 9월 10일 규칙 제936호), 대학원 과주임을 학부 학과장에게 위촉했다. 그리고 종전에는 대학원 정원을 대학 총 정원의 1/10 이내로 제한했는데, 1972년 문교부가 그 규정을 개정하면서 본교는 대학원 정원을 대학 재학생 수

의 1/5로 하도록 학칙을 개정했다. 그에 따라 1973년 대학원 정원이 대폭 증가했다. 또한 1975년 2월부터는 구제(舊制) 박사학위 제도를 폐지하였다.

대학원의 변화는 종합화 계획에 따른 대학원 관리 조직 개편에서도 나타났다. 1975년 3월부터 대학원에 원장과 행정 주사 1명만 두고 교육은 각 대학장에게 위탁했으며 학사 행정은 단과대학 행정실과 본부 교무처·학생처로 이관했다(설치령 제5, 9조와 학칙 제14, 18조). 즉 설치령에서 대학원을 지휘 기관으로 정하고 학칙에서 원장의 교육 책임과 소속 직원의 지휘 감독권을 단과대학과 타 부처로 위탁하게 한 것이다. 결국 대학원 조직은 상징적인 의미만 남고 대학원 교육은 각 대학이, 행정은 교무처와 학생처 행정 조직이 담당하는 형태로 개편했다.

원래 대학원 관리 조직에 대해 두 가지 입장이 있었다. 대학원 연구위원회는 대학원 관리 조직의 독립 기구화와 대형화를 주장했으나, 종합10개년계획은 대학원과정의 교육은 강화하지만 관리 조직은 여러 기관에 분산된 형태로 둘 것을 주장했다. 이 가운데 종합10개년계획을 교육법 규정과 절충하여 대학원 관리 조직 개편안을 만들었다. 또한 설치령 제5조 개정으로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신문대학원을 폐지, 대학원 각 과로 흡수했으며, 대학원과 전문 대학원(보건대학원, 행정대학원, 환경대학원) 체제로 전환했다.

본교 석사과정 입학 정원은 1964년 245명, 1968년 287명, 1971년 425명에서 1973년 704명으로 대폭 증가한 이후로도 1974년 714명, 1976년 1,030명으로 계속 증가했다. 이와 함께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해 입학 전형에서 필답 고사·면접 고사·학부 성적과 교수 추천서 등을 고려하도록 선발 제도를 개선했다. 그러나 실제 필답 고사 이외의 사항은 형식일 뿐 학생 선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또한 정원 증가 외에 교육 내용 강화가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는 학내에 회의적인 분위기가 팽배했다. 대학원 교육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대학원 교육 강화책의 일환으로 대학원이 양적으로 증가했다. 그렇지만 앞서 언급한 2차의 보고서에서 제시한 개선책을 전혀 시행하지 않아 대학원 교육의 강화가 운위되기 이전의 대학원 교육과 질적으로는 크게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 높았다.

이런 상황은 1975년 종합화 이후에도 크게 나아지지 않았는데, 그것은 실험 대학을 운영하면서 학부 교육과 학부 학생 지도에 열중한 나머지 대학원 문제를 상대적으로 경시했기 때문이다. 1977년 8월 대학원 연구위원회는 이 점을 지적하면서 본교 차원에서 개선 가능한 내용을 「서울대학교 종합화에 따른 대학원 강화책 연구 보고」에서 제시했



다. 이 보고서는 대학원 교육 일반에 관한 1971년과 1972년 대학원 전문위원회의 보고를 기반으로 교육 운영 합리화, 연구 관리 조직 능률화 등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안 몇 가지를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 I. 입학시험

- ① 입시관리위원회의 설치: 종합화 이후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이 공동입시관리체제에 묶여 있어 어려움이 많으므로 대학원위원회의 하부기구로 입시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입시에 관련된 제업무를 담당시킨다.
- ② 입학전형: 그 동안 입학시험과목으로 전공, 영어, 제2외국어를 획일적으로 부과하고 동일하게 배점함으로써 신입생 선발에서 전공보다 외국어 성적의 영향이 더 큰 모순을 안고 있었다. 따라서 외국어 시험과목으로 먼저 인문·사회계열은 종전대로 시행하고 그 외 계열에서는 영어만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배점도 전공 200점, 영어 100점, 제2외국어 50점으로 한다. 이외에 면접고사의 형식을 지양하고 필기고사 위주에서 면접고사 위주로 점차 전환한다.

### II. 학위

- ① 학위명칭의 합리적 운영
- ② 학위기의 내용을 신제 박사학위제 실시에 맞추어 현실화할 것
- ③ 과정신설 제한 완화
- ④ 의학·치의학계 이외 분야의 학위과정 과감한 개방

### III. 정원

그 동안 대학원 응시학생수의 영세성으로 학칙에는 계열별 정원만 명시되어 있는데(학과 기준정원, 선발정원, 계열정원 중) 중장기적인 정원산출 모델을 개발하여 학과기준정원을 산출하도록 하고, 정원은 전면적으로 증원할 것

### IV. 유인체제

생활비까지 해결될 수 있도록 장학금 지급을 현실화하고 전공과 연속성을 갖도록 군복무 시 특별 고려할 것

### V. 교과과정의 편성과 운영(원칙)

- ① 석사과정은 학사과정의 연결과정으로, 박사과정과 석사과정의 교과목은 통합하여 편성한다.
- ② 학과단위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교과목당 학점수는 3학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문대학원 또는 야간제 학과의 교과목은 과목당 2학점으로 할 수 있다.

- ④ 각 과정 이수에 필요한 교과학점수는 석사과정 24학점 이상, 박사과정 60학점 이상(석사과정 이수학점 통산)으로 하고, 설정 교과목의 총학점수는 석사과정 학과만 설치된 경우에는 36학점(이수학점의 1.5배), 석·박사과정 병설의 경우에는 90학점을 기준으로 삼는다. 그리고 교과목은 전공과목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필수와 선택으로 구분할 수 있다.
- ⑤ 각 과정 이수에 필요한 연구학점은 학위논문지도로 과하되 석사과정 4학점, 박사과정 6학점으로 한다.(이하 ⑥~⑩ 항목은 생략함)

#### VI. 연구조직 및 관리조직

- ① 대학원과 학부는 동일한 교육조직으로 유지, 유사학과의 통합 및 재편성
- ② 교수의 책임시간 조정(연구기능 향상)과 대학원생의 연구조교 채용 검토
- ③ 전공분리의 원칙: 분리분야의 전임교원 3인 이상, 분리를 요하는 분야의 입학자가 과거 5년간 연평균 3인 이상일 때를 기준으로 잠정 인정
- ④ 관리조직의 확대 개편 및 위원회제도 운영강화: 대학원에 부원장 1인과 전문대학원에 원장보 1인을 신설하고, 연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대학원장과 교무처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또한 연구위원회 아래에 설치된 연구분과 위원회를 적극 이용한다.

위의 개선안은 본교의 종합화안과 문교부의 대학원 강화 정책을 반영하면서 관계 규정을 보완 또는 개정하는 것을 전제했다. 또한 비교적 가까운 시일 내에 실현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했는데, 이것은 실제 대학원 학사 업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 개선안에서 제시한 대학원 강화책은 행정 업무상의 개선 사항일 뿐, 구체적으로 대학원 교육 내실화를 실현할 실천 방안은 아니었다. 1970년대 들어 본교 대학원은 기본적인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으나, 이를 바로 대학원 교육과 연구 활성화로 진척하지 못하였다.

## 2) 대학원 중심 대학론의 등장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특성화 시도

서울대학교는 캠퍼스 종합화와 더불어 대학원 교육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후 본격적으로 대학원 중심 대학을 표방하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 1968년부터 추진해 온 종합화 계획이 마무리되는 1970년대 말 대학원 학문 연구 기능을 강화할 대내외적 필요를 절실히 느꼈다.

우선 1971년 이공계 특수 대학원인 한국과학원이 설립된 후 본교 교수들은 과학원과 경쟁하며 대학원을 강화할 필요를 절감했다. 박정희 정부는 중화학공업정책에 부응하여 고급 과학 기술 인재를 배출할 국내 이공계 대학원이 전무하다는 판단 하에 1971년 한국과학원을 설립했다. 한국과학원은 당시에 드물게 ‘연구 중심 대학원’을 표방했고 정부의 전폭적인 자금과 시설을 지원받았다. 뿐만 아니라 한국과학원 입학생의 경우도 국내 다른 대학원과 현격하게 달라 재학생은 장학금과 연구비를 받았으며 졸업생은 병역 특례 혜택도 받았다. 한국과학원 설립 이전에도 우수한 학부 졸업생이 외국 대학원으로 유학하는 두뇌 유출 현상이 있었지만 서울대학교는 이를 크게 경계하지 않았다. 그러나 1970년대 말 우수한 학부 졸업생들이 점차 본교 대학원을 외면하고 한국과학원으로 몰리는 현상이 두드러지자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다.

한편 1976년 초 박정희 대통령은 중화학 공업에 종사할 기술자 양성이 시급함을 역설했고, 문교부는 그러한 고급 인력을 길러 낼 교수·연구 요원 양성을 본교에 요청했다. 또한 2년 후인 1978년 4월 6일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본교를 찾아와 교수·연구 요원 양성 계획을 연구,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한국과학원과의 긴장과 경쟁은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한층 발전시켜야 한다는 학내의 요구를 높였고, 박정희 대통령의 교수 요원 양성 계획 요청은 이러한 필요를 더욱 증폭시켰다. 아래 윤천주 총장의 말처럼, 이제 서울대학교는 교육기관에서 연구기관으로 거듭나야 했다. 결국 1970년대 본격적으로 추진한 중화학공업정책의 직간접적 영향으로 본교의 목표와 기능이 대학원 중심 대학, 학문 연구 대학으로 명백히 전환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서울대학교는 교육시설에 있어서 세계 어느 대학에도 뒤지지 않으며 교육하는 대학으로서의 기능은 완성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교육하는 대학을 한 차원 넘어선 연구하는 대학이 되어야 한다. (윤천주 총장, 1978년 10월 14일, 개교 32주년 기념 식사)

이러한 배경 하에 본교는 1978년 11월 20일 ‘서울대학교 대학원중심대학특성화계획’(이하 특성화계획)을 문교부에 제출했다. 특성화계획은 “1979년 현재 학사과정 학생 규모를 유지하여 이의 내실을 기하면서 석사·박사과정을 양적으로 확대하고 질적으로 심화시켜 우수한 교수·연구 요원을 양성하고자 하는 서울대학교의 일련의 계획”이었다. 본교가 특성화계획을 구상하기 전에 문교부는 이미 1973년부터 ‘대학 특성화 계획’

을 시행한 바 있었다. 이 계획에서 문교부는 고등교육 확대·강화를 위해 본교를 교수 요원 양성 기관으로 특성화했다. 그러나 70년대 후반까지 문교부의 대학 특성화 노력만으로 본교의 대학원 기능을 강화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이에 1978년 본교는 별도로 특성화계획을 입안했던 것이다.

특성화계획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자. 특성화계획 구상이 필요한 이유는 세 가지였다. 첫째 1980년대 이후 전개될 고도 산업 사회를 이끌어 갈 고급 인력 양성·배출이 시급하고, 둘째 고급 인력 양성·배출은 고등 교육의 확대 강화를 전제로 하는 바 교수, 연구 요원 양성·확보는 필수적으로 선행해야 하며, 셋째 이러한 시점에서 고급 인력은 해외에 의존해서 양성할 수 없으므로 대학원과정의 모든 분야(특히 기초 과학과 응용 과학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자와 학사 운영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우리 나라 전체 대학의 교수 확보율이 법정 기준의 47.73%라는 문교부 통계를 인용하고 이를 기초로 본교 대학원과정의 분야별 입학 정원과 이에 따라 충원해야 할 교수 요원수를 책정했다.

특성화계획은 위의 사항을 전제하고 대학원 교육 강화 방안을 대학원과정의 성격, 운영 방침, 학사 관리 체제, 학생 선발과 과정 이수 요건, 연구 지원 시설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 제시했다.

먼저 대학원과정의 새로운 성격으로 ① 교수·연구 요원의 기본 학력을 석사학위 이상으로 전제하고, ② 우수한 학사의 유인 체제 확립, ③ 임용 전 교육(Pre-Service Training)을 집중 실시하여 조기 배출할 것, ④ 고등 교육 기관과 연구소, 산업계 현직자를 위한 재교육 또는 보강 교육 실시, ⑤ 학사과정과 석사과정 간의 교과 이수 체계를 부분적으로 연계하며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은 분리하되 장차 단선 통합 운영 가능성을 모색할 것, ⑥ 학문 중심 학위와 전문 직업 분야 학위의 구분 모색 등을 언급했다.

대학원과정의 새로운 운영 방침으로 ① 교수의 자체 능력 강화에 주력, ② 학문 분야별 이론 구성과 연구 방법의 기본 원리 체득, 학문 간 협동 강화로 교수 방법의 개선 도모, ③ 우수한 교수진, 체계적인 교과 과정 정립 후에 전공 과정 설치 허용, ④ 교수의 대폭 증원, 타 기관 전문가와 해외 학자 초빙, ⑤ 대학원생의 학내 상주화 등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이를 위한 학사 관리 체제의 강화 방안으로 ① 대학원장의 권한 강화(스태프 기능에서 지휘·감독 기능권자로)와 각 단과대학 대학원 업무 전담 직원 배치, ② 대학원 전담 교수의 별도 배정, ③ 현행 대학원 각종 위원회의 재편과 현행 학사위원회 밑에 학과 단

위로 대학원 전담 교수로 구성된 대학원과정위원회를 두어 학과별·전공별 교육 운영 계획을 입안할 것 등을 제시했다.

학생 선발과 과정 이수 요건은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1. 학생선발: 대학원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업이수에 필요한 기본실력의 검정방법을 표준화하고, 면접에 의하여 자질을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타 대학으로부터의 교수요원 장학생을 일정범위 내에서 받아들인다.
2. 유인체제: 우수학생 조교 활용, 장학금지급범위 확대, 자연계 학생 병역혜택 고려
3. 교수 및 연구요원에게 석사과정, 박사과정 2년간의 상주의무(Residence Requirement)를 부과, 학업에 전념케 한다.
4. 대학원과정의 이수연한은 석사과정: 과목이수 3년 이내, 논문제출은 과목이수 후 2년 이내로 하고, 박사과정: 과목이수 4년 이내, 논문 제출은 과목이수 후 4년 이내로 한다.
5. 박사과정에는 부전공 필수화
6. 수업방식은 강의·세미나·과간 협동 또는 연구소에 의해 제공되는 세미나 등으로 다양화한다.
7. 석·박사과정 연계운영을 위한 시험들: i) 외국어시험, ii) 대학원 1년차 수료후 자격시험 실시(자격시험 합격자는 석사논문 작성 또는 박사과정 진입), iii) 박사과정 1년차 이수 후 종합시험 실시
8. 논문작성 계획서 제출

또한 특성화계획은 대학원과정에서 연구가 교육의 필수 부분이라는 인식 하에 대학원생들이 교수의 연구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교과 과정의 한 부분으로 보았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연구 지원 시설 강화 방안으로 서울대학교의 연구소와 대학원 교육의 밀접한 연관 운영을 위해 연구소의 기능 재조정, 대단위 연구소의 설치와 발전, 연구소 상임 연구원 배치 등을 계획했다.

본교는 대학원 교육과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특성화계획을 크게 ‘교수 요원 양성’과 ‘대학원 중점 육성 연구’ 두 가지로 실현했다. 먼저 교수 요원 양성을 살펴보자. 문교부의 기본 방침은 공학, 경상, 외국어, 기초 과학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대학원 입학생을 증원하는 것이었는데, 서울대학교는 문교부와 입장이 다소 달랐다. <표 4-1-10>에서 보듯 서울대학교는 대부분의 학문 분야에서 정원 증원을 신청했으나, 문교부는 자연 과학, 공학, 행정 등 몇몇 분야의 증원 신청만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문, 사회 분

〈표 4-1-10〉 대학원 입학 정원 증원 상황(1979년)

대학원	석사과정				박사과정		
	1978년 정원	신청	증감	문교부 조정 후	1978년 정원	신청	증감
인문대학원	90	150	60	140	25	60	35
사회과학대학원	254	400	146	380	45	80	35
자연과학대학원	140	300	160	300	44	100	56
공과대학원	224	400	176	400	60	80	20
가정대학원	25	40	15	25	-	-	-
사범대학원	160	200	40	160	6	6	0
예술대학원	50	70	20	50	-	-	-
행정대학원	100	150	50	150	-	-	-
농림대학원	59	100	41	90	17	30	13
의과대학원	140	170	30	140	42	42	0
보건대학원	70	100	30	100	-	-	-
환경대학원	60	70	10	70	-	-	-
계	1,372	2,150	778	2,005	239	398	159

비고: 박사과정은 문교부에 신청한 대로 승인하였다.

출전: 『서울대학교 40년사』, 532쪽.

야 등은 신청 정원을 축소했으며, 가정학, 의학 분야 등은 증원을 불허하고 전년도 정원으로 동결했다.

결국 교수 요원 양성 계획에 따른 대학원생 정원 증가는 주로 이공학 분야에서 이루어졌고, 이는 다시 ‘교수 및 연구 요원 장학생’ 선발과 그들에 대한 특전 부여로 구체화되었다. 본래 특성화계획은 교수 요원 장학생으로 자연계 700명을 제시했으나 1979년 신입생 모집에서 400명으로 조정하였다. 이로써 1979년부터 1981년까지 해마다 400명의 교수·연구 요원 장학생을 선발하였고, 이들 중 30%는 지방 대학 출신자 또는 총·학장이 추천하는 자로 충당하였다.

교수 요원 장학생에게 부여된 특전과 의무 사항은 다음과 같았다.

1. 재학중(2년간)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 면제
2. 학습에 필요한 장학금 지급: 월 5만원(신입생은 연간 50만원, 재학생은 연간 60만원), 총·학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는 본교에서 1/2, 해당대학에서 1/2을 부담했는데, 학위 취득 후 추천대학의 교수요원으로 채용을 보장받은 경우였다.
3. 병역혜택: 1979학년도 신입생 모집시에는 “문교부 장관이 지명하는 기관에서 최저 3년

간 종사하는 의무'로 규정했으나 1980학년도 입학자에게는 “군복무 1년, 지정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병역의무를 가름한다고 되었다. 1980년 1월 4일 공포된 「자연계 교원확보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적용한 것이었다. 그러나 1979년에 선발된 교수요원 장학생은 학위취득 후 실제로 위의 의무복무기간(군, 지정기간을 합하여) 3년 이외에 수업료 및 기성회비 면제에 대한 의무복무기간 1년이 더 추가되었다. 1980·1981년에 입학한 교수요원 장학생은 「자연계 교원확보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폐지되고 대신 만들어진 「대학원생 등의 병역특례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특수전문요원으로 관리되었다.

#### 4. 이러한 특전 이외에 재학기간 중 일정기간 교수의 연구 보조의무를 지냈다.

이와 같은 교수 요원 양성 계획의 주요 목표 분야는 공학계였다. 1979년 교수 요원 장학생으로 선발한 400명의 계열별 분포는 자연 과학 계열 90명, 가정학(식품 영양학) 계열 2명, 사범(자연) 계열 1명, 공학 계열 258명, 농학 계열 25명, 의학 계열 1명, 약학 계열 8명, 수의학 계열 2명, 보건대학원 7명, 환경대학원 6명이었다. 총장 윤천주는 1979년 2월 6일 “당초 교수 및 연구 요원은 공대 등의 요원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구성되어 시행된 것이고, 약대·의대 등에 (교수 요원 장학생) 배정이 적은 것은 불가피했고 오히려 당국의 양해로 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언급했다. 이처럼 본교 대학원 특성화계획은 70년대 중화학공업정책과 공업인력 양성을 뒷받침할 공학계 교수 수요가 사회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과 관련되었다.

본래 특성화계획은 인문학 및 사회 과학 계열의 교수·연구 요원 장학생 수를 450명으로 제시하였고 1979년 인문·사회계 신입생 모집 요강에서 “교수 및 연구 요원 장학생 100명 선발”이라고 밝혔지만 인문 사회 계열 교수요원과 자연계 교수요원의 성격은 크게 달랐다. 자연계가 공학 계열 위주긴 했으나 자연 과학 계열, 공학 계열, 사범(자연) 계열, 농학 계열, 의학·보건학 계열, 식품 영양학과, 환경 조경학과, 환경 계획학과 등으로 대상 계열을 밝힌 데 비해, 인문학 및 사회 과학 계열은 대상 계열을 명시하지 않았고 1979년에 선발한 교수 요원 장학생 선발은 70명에 불과했다(한국학 장학생 5명을 포함하면 75명). 그리고 인문학 및 사회 과학 계열 장학생에게 자연계에 준하는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나 병역 특혜는 주지 않았다. 장학금도 자연계가 국고에서 지원을 받는데 비해 인문·사회계는 학교 자체에서 마련한 자원(기성회비)으로 충당했다. 즉, 인문·사회계 교수 요원 양성은 특성화계획의 분명한 목표가 아니었기에 시행 초기부터 축소 운영되었던 것이다.

본교는 교수 요원 양성과 함께 '대학원 중점 육성 연구' 사업을 통해 특성화계획을 실현하였다. 특성화계획에서 이미 대학원 교육 정착을 위한 여러 조치와 그 실현을 위한 예산 지원과 특별 배려를 요청하였는데, 그에 대한 시행 세부 계획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중심대학특성화를 위한 연구비신청계획'을 수립하여 문교부에 신청했다. 연구비 신청 사유로 ① 대학원 교육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교수 자체 능력 향상, ② 교육의 정상화(특히 밀착 교육 강화), ③ 학사과정에 비해 대학원 예산이 전무한 것, ④ 교수 연구비가 계속 증액되고 있으나 대학원 교육 강화에 공헌하지 못한 실정, ⑤ 대학원 교육 강화를 위한 기초 학문 분야의 전면적인 개발 연구가 시급히 필요한 것 등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본교의 연구비 신청에 대해 문교부는 1979년 4월 11일 '대학원 중점 육성'이라는 명목으로 연구비를 배정했다. 문교부는 이를 본교에 통보하면서 연구비 신청 지침에 대한 '1979년도 대학원중점육성연구조성비 관리지침'을 1979년 4월 16일 관련 연구 책임자에게 전달하였다. 대학원 중점 육성 연구비로 1979년에 6억 5천만 원을 배정하였고 이 연구비를 바탕으로 교수 765명과 대학원생 579명이 총 236건의 연구 과제를 1년 간 수행했다. 연구 결과는 『1979년 대학원 중점 육성 연구 결과 보고서』로 간행하였다. 1979년 236건은 연구 초점에 따라 ① 대학원 교육 전반에 관한 연구 27건, ② 교수 요목에 따른 문헌 정리를 포함한 교재 연구 18건, ③ 교과 과정과 교육 방법에 관한 연구 71건, ④ 각 학문 분야에서의 기초 연구 120건 등이었다. 문교부는 대학원 중점 육성 연구 사업을 1986년까지 지속한 후 폐지하였다.

이처럼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까지 시행한 특성화계획은 주로 이공학 분야의 교수 요원 장학생 제도와 대학원 중점 육성 연구비 확보로 실현되었다. 이 계획은 본래 정부의 중화학공업정책과 한국과학원과의 경쟁 관계를 고려하여 특수하게 나온 것이었으나, 계획을 진행하면서 서울대학교 대학원은 전반적으로 안정을 찾았다. 1980년대 초까지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원자와 대학원생 수가 꾸준히 증가했고 그에 따라 연구 성과도 늘었다. 대학원 중심 대학을 표방한 1970년대 말의 의욕적 기획인 특성화계획을 통해 서울대학교 대학원은 정상적인 운영 궤도에 올랐다.

### 3) 1980년대 대학원 위기론 확산과 대학원 중심 대학론의 재부상

1970년대 말에 나온 각종 대학원 교육 강화 방안의 공통점은 “학부 정원은 현 수준에



서 동결하고 대학원 정원은 점차 늘려간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1980년 이른바 ‘7·30 교육개혁조치’ 때문에 이와 같은 기본 전제가 무너졌다. 학부 정원은 1980년까지 대체로 동결되었으나 1981년에 거의 두 배로 급격히 증가했다. 학사과정의 급격한 정원 증가로 학부 교육 여건이 점차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대학 당국은 대학원 교육 강화 의지를 억제했고 대학 교육의 주된 관심은 학사과정으로 되돌아갔다.

대학원 개혁과 발전을 지속시킬 만한 구체적인 구상과 실천 계획도 1980년대 중반까지 지지부진했다. 1979년에 발표한 「서울대학교 발전10개년계획 연구 보고서」의 대학원 교육 방안은 10·26 사태 이후 급격한 정치적 변화가 일어나 결국 최종안으로 택하지 못했다. 이후 1979년의 발전10개년계획의 취지를 살리고 7·30교육개혁조치로 인한 학내 변화를 반영한 1983년도의 「서울대학교 발전10개년계획 연구 보고서」 역시 본교의 최종 실행안으로 확정하지 못했다. 또한 이 보고서는 7·30 교육개혁조치 이후의 학사과정 변화를 현실로 인정한 채 대학의 양적 팽창을 질적 차원으로 고양시키자는 구호에 불과했다. 이 보고서는 예산 조치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방안이거나 1970년대 대학원 교육 강화 계획과 실천에 대한 반성을 기반으로 한 교육 계획이라기보다는 다분히 원론을 밝힌 계획에 불과했다.

한편 대학원 중점 육성 연구의 일환으로 1981년부터 일련의 대학원 교육 내실화 방안이 쏟아져 나왔다. 이 방안들은 연구 책임자 명의로 된 개별 보고서 형태였는데 대학원 교육에 대한 일반론, 교육 운영에 관련한 제도, 기타 개별 항목에 대한 연구 보고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많은 보고서 중에서 「서울대학교 대학원의 교육 실태 조사 연구」(강신택 외, 1982년), 「대학원 제도 개선 실행 방안 연구」(김종운 외, 1982년), 「대학원 중심 대학의 대학 교육 개혁 사업 추진 방안」(강신택, 1983년) 등이 주목을 받았다.

이 보고서들은 석·박사과정의 통합 운영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석·박사과정의 동일화 등 새로운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대체로 대학원 제도에 관한 일반론으로 1980년까지의 대학원 강화 방안과 7·30 교육개혁조치의 갈등을 해소하려는 것이었다. 특히 「서울대학교 대학원의 교육 실태 조사 연구」는 “기존의 제도를 크게 개혁한다거나 예산 조치가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과제는 제외하고 교무처의 수준에서 추진할 수 있는 과제와 그 동안 각종 보고서에서 여러 차례 제안된 것을 선별적 추진 사항으로 택하기로 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에 따라 석·박사과정 연계 운영, 협동과정 운영 체계화, 논문 제출 자격 고사 중 외국어 시험 관리, 논문 연구 등록, 기초 과정 위원회 기능 강화, 교

과 과정 운영 개선 등 6가지의 과제를 택했다.”라고 자신들이 제시한 대학원 실태 연구와 개선책의 의미를 한정할 정도였다. 1980년 이후 대학원 교육 개선에 관한 소극적 논의들은 정부의 재정적·정책적 지원이 1970년대 대학원 특성화 계획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는 것을 반영했다. 그리고 제도 개선을 교무처 수준에서 가능한 것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한, 대학원 중심 대학을 지향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1980년대 전반적인 대학원 운영 상황은 1970년대와 비교하여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1980년대 대학원의 각종 제도는 1970년대에 이미 마련한 운영 합리화를 추구한 정도였다. 1982년 9월 권이혁 총장은 “서울대학교의 이익만을 위하여 늘어나는 대학 교육 수요를 외면할 수는 없다.”라고 말하며 “현재 화급한 당면 과제인 교육 시설과 교수난을 해결하고 나면 다시 서울대학교 발전 계획의 추진에 박차를 가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는 1970년대 말 활발했던 대학원 중심 대학에 대한 구상과 실천을 1980년대 초 중단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한 것이었다.

본고는 80년대 중반 이후 장기 발전 계획을 구상하면서 다시 대학원 내실화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1985년 9월 ‘서울대학교 발전장기계획(1987~2001년)’을 수립하기 위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대학원 중심 대학에 관한 논의가 다시 학내에서 활발하게 일어났다. 1970년대의 대학원 중심 대학론과 마찬가지로 1980년대에도 서울대학교의 대학원 중심 대학에 대한 이상은 민족의 대학으로서 국내 모든 학문 분야 연구를 선도하고 그 결과를 국내의 대학 교육 전반에 제공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와 1980년대의 대학원 중심 대학론은 논의를 시작한 배경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1970년대의 대학원 중심 대학론은 박정희 정부의 중화학공업정책을 뒷받침할 과학 기술 인력을 배출하기 위한 교수 요원 양성이라는 국가·사회적 의미와 목표를 반영했다. 그런데 1980년대의 대학원 중심 대학론은 그러한 국가·사회적 요구보다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의 내재적 발전에 따른 순수한 아카데미즘의 추구를 반영한 학문 연구 중심 대학론이었다. 다시 말해 70년대까지만 해도 대학원의 주요 기능을 교수 인력의 배출, 즉 교육에 두었지만, 80년대는 교육보다 대학원에서 이루어지는 학문 연구 활동에 더 중점을 두었다.

대학원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교수들의 사고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이 이제 세계적 수준의 업적과 연구자를 낳아야 한다는 인식과 더불어 바뀌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국제 기준에 비추어 서울대학교의 현황을 재점검하면서 새로운 안목을 가지고 장기적인 대학 발전을 추구하자는 여론이 높았다. 즉 80년대 이전까지 서울대학교는 국가 발전

과정에 필요한 중견 인력 양성, 선진 이론과 기술의 도입·전파를 주된 기능으로 삼았으나, 80년대부터는 기존 기능을 넘어서 기초 이론을 창조적으로 개발하고 기술 혁신을 선도하며 고급 두뇌를 자력 생산하는 등 새로운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요청을 받았다. 이제 서울대학교는 한국 고등 교육의 중심에서 나아가 세계적인 학문 연구 중심 대학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학문 연구 중심의 대학원 중심 대학 구상은 1987년에 발표한 「서울대학교 발전장기계획(1987~2001년)」(이하 발전장기계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발전장기계획은 서울대학교가 “민족의 대학”에서 “세계의 대학”으로 약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서울대학교의 역할이자 대학원 중심 대학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① 창조적 학문 연구를 통하여 이론과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국내외 타 대학들에게 주체성 있는 교육 소재를 공급하고 외국에 의존하는 학문적 성향을 극복할 것, ② 대학원과정 교육의 충실화를 통하여 교수·연구 요원을 양성·공급함으로써 박사급 고급 두뇌를 포함한 고급 인력의 자력 공급 비율을 높일 것, ③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응용 연구를 활성화하여 새로운 정책과 기술을 끊임없이 개발할 것, ④ 고도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을 계속 교육시켜 정책 발전과 기술 향상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게 할 것.

그러나 세계의 대학으로 약진하기 위한 발전장기계획은 당시 서울대학교의 학문 연구가 세계적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다. 실제 발전장기계획의 대학 연구 활동이나 대학원 구상을 기획한 이들은 당시 학문 연구의 부진과 대학원 운영의 부실함을 지적하고 그 원인을 파악하고자 노력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표 4-1-11>과 같다. 이 표에 제시한 문제점만 살펴보아도 1980년대 후반 서울대학교의 연구 활동과 대학원 교육을 활성화하기가 매우 어려웠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발전장기계획은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단계별 실천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했고, 본교는 이러한 목표들을 1987년부터 실행에 옮겼다.

본교는 발전장기계획의 제1단계 사업 기간인 1987년부터 1991년까지를 기반 조성기로 설정하고, 체제 정비와 투자 강화를 목표로 세웠다. 1987년도부터 진행한 체제 정비 사업은 학사과정 학생 정원 감축, 교수 정원 확대, 직원 정원 확대, 학부 설치 등 종류와 내용이 매우 방대했다. 그런데 이 사업들 중 가장 확실하게 실현하고 가장 큰 효과를 거둔 것은 1987년 연구처 설치와 1989년 연구처의 법적 제도화였다. 연구처의 설립으로 연구 행정을 합리화하고, 단계적으로 연구비 관리, 연구 업적 관리와 평가, 연구 기자재 수입 대행과 관리 등 구체적 업무들을 체계화하였다. 반면 발전장기계획 제1단계 사업

〈표 4-1-11〉 1987년도 발전장기계획의 연구 활동 및 대학원 문제점 분석

	연구 활동 부진의 요인	대학원과정 교육 부실의 요인
대학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학생 규모에 비해 교수 부족</li> <li>· 조교, 조수, 조무원 등 지원 인력의 부족</li> <li>· 연구 및 개발의 대학 기능 미정립</li> <li>· 연구소의 침체, 연구소 평가 부재</li> <li>· 연구 지원을 전담할 행정 조직의 미비</li> <li>· 도서관, 전자계산소, 기타 지원 기관의 취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사과정 학생에 대한 지도 부담 과중</li> <li>· 행정적 지원 인력의 부족</li> <li>· 각 대학의 행정이 학사과정 위주로 되어 있어 대학원과정이 부차화</li> <li>· 대학원과정 교육 소홀</li> <li>· 지나친 학과의 세분화</li> <li>· 대학원 전담 행정 조직의 미비</li> <li>· 지원 기관의 후진성</li> </ul>
학사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책임 강의 시간(주 당 10시간)의 과중</li> <li>· 경쟁적 연구 풍토의 결여</li> <li>· 연구 경비 지원의 불합리</li> <li>· 국제 학술 교류 여건의 미비</li> <li>· 연구 기기의 부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석사 및 박사 과정 선발 제도의 획일성</li> <li>· 교과 과정 운영의 비효율</li> <li>· 장학금 부족 등 면학 여건의 미비</li> <li>· 학위 제도의 불합리</li> </ul>
대학 행·재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위원회 제도의 연구 활동 진흥 기능 미약</li> <li>· 책임용 제도로 인해 교수가 안정적 연구 생활을 하는 데 제약</li> <li>· 연구 기자재 도입 등에 행·재정적 자율성 제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원 학사 관리 및 장학 업무를 담당할 위원회나 자문 기구의 미비</li> <li>· 교수 근무 조건의 제약</li> <li>· 행정직의 전문성 및 인사 자율성의 결여</li> <li>· 학사과정과 대학원과정의 교육 비용이 동일하게 책정되는 등 재정의 불합리</li> </ul>
캠퍼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 캠퍼스 가용 면적만으로 새로운 시설 수용 불가, 농과대학·수의과대학의 연구 환경 악화</li> <li>· 연구실 및 각종 연구 지원 시설의 부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 가용 면적으로 대학원 관련 시설 증설에 제약, 농과대학·수의과대학 교육 환경 악화</li> <li>· 대학원생을 위한 면학, 연구 시설, 복지 시설 등의 부족</li> </ul>

출전: 『서울대학교 발전장기계획(1987~2001년)』, 13-24쪽에서 작성.

에서 구상한 대학원과 연구소 체제 정비는 부진했다. 80년대 말 학문 연구 중심의 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발전장기계획의 과제들은 90년대 들어 보다 본격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천되었다.

## 제4절 연구 중심 대학의 기치와 세계화의 지향(1980년대 말~2006년)

### 1) 대학원 중심 대학의 연구 여건 조성

1975년 캠퍼스 종합화 이후 서울대학교는 지속적으로 대학원 중심 대학을 표방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대학원 제도 개선을 이루었으며, 국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교수·연구 요원 양성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까지 본교는 대학 운영의 대부분을 학부 교육에 치중하여 실질적으로 대학원 교육과 연구를 내실화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1980년대 말 본교는 고급 인력 양성뿐 아니라 세계적 학문 연구의 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해 발전장기계획을 마련했다. 이에 대한 첫 번째 실천으로 1987년 국내 대학 중 최초로 연구처를 만들어 연구 행정을 합리화하고 효율화하였다. 연구처는 연구비 중앙 관리 제도와 간접 연구 경비 제도를 도입하여 연구비를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했으며, 연구비 관리와 관련하여 교수들의 시간적·행정적·법률적 부담을 덜어 주었다. 1993년 연구비 중앙 관리 제도를 시행한 후 간접 연구 경비 수입을 교내 학술 활동 지원 사업에 사용하여 학술 연구 활동에 큰 도움을 주었다. 또 본교는 1990년 재단 법인 서울대학교 발전기금을 설립하여 연구와 학술 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자체 재원 조달 기구를 마련했다.

정보화의 세계적 흐름과 함께 본교는 1989년부터 전산망을 확충하여 관악 캠퍼스, 연건 캠퍼스, 수원 캠퍼스를 연결하는 통합 전산 시스템을 갖추고 정보광장과 SOLARS를 개발하는 등 학교 안팎으로 정보 교류 기반을 갖추었다. 그리고 국제화 시대에 대비해 외국 대학과 학술 교류, 공동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제 학술 교류 협정을 확대하였다. 1986년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학교(U.C.L.A)와 학술 교류 협정을 체결한 이후 한동안 외국 대학과 학술 교류 협정이 없었는데, 1989년 호주 시드니대학교(The University of Sydney)를 시작으로 다시 외국 대학들과 학술 교류 협정을 맺었다. 또 1991년부터 '서남 초청 강좌'를 개설해 우수 외국 학자를 초빙 강연케 하여 국내 학문 연구 분위기를 쇄신하고자 하였다.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에 본교는 연구 관련 제도를 개혁함과 동시에 연구 시설을 크게 확충했다. 대학의 연구 기능을 강조하면서 연구소 설립을 장려하여 1980년대

말부터 연구소가 크게 늘어 1987년 42곳에서 1994년 최대 83곳으로 증가했다. 늘어난 연구소를 수용하기 위해 연구소 전용 건물을 신축하여 반도체공동연구소, 유전공학연구소, 신소재공동연구소, 기초전력공학공동연구소, 자동화시스템공동연구소, 지역종합연구소 등 11개의 시설을 준공하였다. 그러나 연구소가 1989년부터 급증하면서 대학 연구 활동이 지나치게 분산되고 부실해질 우려가 있었다. 따라서 연구소 운영을 합리화하고 기능이 중복되는 연구소들을 통폐합하여 연구소의 자생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본교는 이에 연구소 평가 제도를 마련하고 1994년 하반기에 1단계 이공계 연구소 평가를 시작으로 1995년 상반기 인문·사회계 연구소와 예체능계 연구소 평가를 실시했다.

또한 본교는 단과대학 건물을 신축하여 연구동과 실험동 시설을 크게 확충하고, 1993년 기초과학교육연구공동기원을 완공함으로써 과학 기술 연구를 위한 첨단 시설을 마련하였다. 이로써 캠퍼스 지형도를 바꿀 정도로 학내 연구소 전용 건물, 실험 실습실, 연구동의 수가 크게 증가했다.

1990년대 초반 본교는 교수의 학문 연구를 활성화하고 경쟁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교수 업적 관리와 평가 제도를 추진하여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교수의 승진, 재임용, 연구년제에 반영토록 하였다. 또 대학원 제도 개편과 함께 학문 후속 세대인 대학원생의 처우 문제를 개선하고자 했다. 1991년 대학원 석·박사과정 통합 연계 운영 제도를 시행하여 석사학위 수여 예정자 중 모집 인원의 50% 이내에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 입학 시험 없이 곧바로 박사과정에 입학하도록 허용하였다. 이 제도를 통해 특정 학문 분야에서 대학원 입학 고사와 논문 제출 자격시험을 반복해 보느라 연구를 중단하고 불필요하게 시간을 낭비하는 폐단을 줄였다. 또 석·박사과정 연계 제도를 도입하여 대학원생이 학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수학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하여 학위 기간 지연으로 인한 두뇌 유출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캠퍼스 종합화 이후 1990년대 초까지 본교는 대학원생의 면학과 연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지는 못하였다. 연구 중심의 대학원 중심 대학을 표방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제도적·시설적 개선과 대내외적 노력을 하였지만, 연구 인력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데는 미진하였다. 이에 1990년대 초반 학내에서 교수와 대학원생이 학문 후속 세대 육성에 관한 논의를 활발하게 벌였다. 1992년 10월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교수협의회는 '학문 후속 세대 육성을 위한 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토론회는 대학원생을 보는 관점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상징적인 사건이었

다. 이전까지 대학원생을 단지 교육의 수동적 대상으로 보았는데 토론회를 통해 대학원생을 학문 연구의 계승자이자 동반자로 인식하는 풍토가 확산되었다. 대학원생 역시 학내에서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하여 연구실, 전산실, 세미나실 등 연구 활동의 기본 공간 확보, 병역 문제 해결, 교과 과정 결정에 대학원생 참여, 도서관 장서 확충, 대학원생 기숙사 확충, 연구 인건비의 현실화, 과도한 프로젝트 업무 축소 등을 시급한 문제로 제시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까지 우수한 학사과정 졸업생을 유치하고 대학원생의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은 미진한 상태였고, 1990년대 후반까지도 학문 후속 세대에 관한 논의를 계속하였다.

이와 같이 본교는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까지 대학원 중심 대학이 갖추어야 할 기본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1990년대 초 서울대학교는 본격적으로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 탈바꿈하기 시작했다. 비록 연구 여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지만, 학내 구성원들이 더 나은 연구 환경을 위해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하였다는 사실은 본교가 연구 중심 대학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한다. 1990년대 중반 서울대학교는 연구 환경의 열악함, 연구비 부족, 대학 재정 부족, 학문 후속 세대의 현실과 위기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책 마련과 실천에 매진하였다.

## 2) 세계화와 연구 중심 대학의 이상

1990년대 초반 한국 사회의 세계화 흐름과 함께 본교는 대학원 중심 대학을 주요 목표로 ‘국제 수준’, ‘세계의 대학’ 달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1995년 발표한 「서울대학교 2000년대 미래상」은 “국제 수준의 대학원 중심 대학”을 분명하게 표방하며, 국제 수준을 50% 이상의 학문 분야에서 세계 상위 20위권 대학에 들어가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1990년대 중반에도 본교는 연구 환경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였는데, 외국의 우수 ‘연구 대학(Research University)’을 비교 준거로 삼으면서 연구 환경을 국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분명한 목표로 정했다. 연구 대학은 본래 미국 상위 100대 대학을 가리키는 용어지만, 1990년대에는 각 국가의 최고 우수 대학을 가리키는 용어로도 사용되었다. 1990년대 중반 연구 대학이 본교의 목표가 되면서 ‘대학원 중심 대학’보다 ‘연구 중심 대학’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쓰게 되었다.

한편 본교 안팎에서 본교와 외국 우수 대학, 특히 미국 상위권 대학을 비교하면서 본교는 연구 역량, 국제 경쟁력에 대한 논란을 겪었다. 1990년대 초까지는 주로 학내 논의로 연구 환경의 열악함을 극복하여 학문 경쟁력을 향상시키자는 자구적 노력에 대한 것이었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의 논의는 서울대학교 연구 능력과 국제 경쟁력까지 확대되었다. 특히 외국 대학 평가 기관이 1996년 서울대학교가 세계에서 800위권, 1997년 서울대학교가 아시아에서 16위라고 발표한 것을 언론이 보도하자, 국내 최고라 자부하는 본교의 국제적 지위에 대한 국민과 사회의 실망이 강하게 드러났다. 국제화의 흐름은 서울대학교의 국제적 지위뿐만 아니라 연구자, 연구 업적의 세계적 수준에 대해 광범위하게 반성하게 하면서 연구의 질적 향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서울대학교 국제 순위 논란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흐름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고등 교육 정책 변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 1970년대 말 미국 대학에서 시작한 시장 경제 논리에 따른 고등 교육 개혁은 1980년대 서양권 대학에, 1990년대 아시아권 대학에 급속도로 전파되었다. 1970년대 후반 미국 대학들은 정부의 지원이 감소하고 인플레이션이 지속되자 재정 압박에 시달렸고, 이를 해소하려고 대학에 자본주의 시장 원리를 적극 도입하였다. 대학이 경제에 기여해야 한다는 논리를 강조하여 산업체와 더 적극적으로 협동하고 대학의 운영 방식을 바꾸었다. 이러한 변화는 고등 교육 체제에 일대 혁신을 가져와 대학을 점차 ‘지식 공장(Knowledge Factory)’, ‘기업적 대학(Corporate University)’이라는 자유주의 시장 경제적 관점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

대학의 자본주의화 경향을 ‘아카데미 캐피탈리즘(Academic Capitalism)’이라고 부르는데, 그 특징은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대학은 한정된 인적·물적·재정적 자원을 놓고 경쟁을 벌이는 시장의 주체이며, 투입의 결과로 생긴 명성, 수입의 증가 등을 통해 순위가 매겨지는 집단이다. 두 번째, 대학의 최고 행정가들은 기업가처럼 살아남기 위해 경영 전략을 기획하고 실행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재정 수입의 포트폴리오를 다원화하거나 특정 자원 손실에 대비해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 세 번째, 대학은 치열한 연구 경쟁 체제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독점적으로 보호할 제도와 기구를 마련해야 한다. 네 번째, 시장 원리는 대학 학사과정 학생에도 적용한다. 교육 소비자인 학생과 학생에 대한 수요자인 산업체의 공통 요구로 인해 전통적으로 대학에서 행하는 교양 교육이나 기초 교육보다 실무에 빨리 적용할 수 있는 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다섯 번째, 시장 경제 체제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대학 형태는 미국 하버드대학교와 같은 사립대학교이다. 사립대는 제도가 유연하고 자율성이 크기 때문에



사회적 요구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국·공립 대학은 민영화하거나 기업이 인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990년대부터 국내 대학 역시 아카데미 캐피탈리즘의 영향을 받았다. 정부는 수월성, 과학 기술, 산학 연계 위주의 대학 지원 정책을 폈고, 정부 정책이 변하면서 국내 각 대학의 연구 활동 성격도 변했다. 특히 과학기술부의 우수 연구 센터 사업과 교육부(교육인적자원부)의 신자유주의적 고등 교육 지원 정책은 한국 사회에서 대학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크게 바꾸는 계기로 작용했다.

과학기술부는 1990년 우수 연구 센터 사업을 시작하여 거점 대학을 중심으로 전국의 우수 연구자들을 선정하고 공동으로 연구하게 하여 경쟁력 있는 선도 연구자 집단을 양성했다. 각 센터에 연간 10억 원 정도의 대규모 연구비를 지원하고, 연구 실적을 국내외 논문 발표(전체, 과학기술논문색인(SCI)), 기술 이전과 상품화, 국내외 특허 취득, 석·박사 배출 등의 지표로 평가하여 이전과는 현저히 다른 정부 연구비 지원 방식을 만들었다. 본교는 이 사업으로 집중적인 지원을 받아 과학 기술 분야부터 연구 중심 대학 연구 풍토를 조성하기 시작했다. 이미 오래전부터 본교는 연구 중심의 대학원 중심 대학을 추구했으나 이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재정적 기반이 취약해 대학 연구 문화 형성은 요원한 상태였다. 그러나 우수 연구 센터 사업이 교수들에게 연구비를 지원하고 논문 등을 지표로 삼아 연구 실적을 평가하는 등 새로운 연구 풍토를 조성함으로써, 본교 교수들이 세계적 연구 경쟁 체제에 적극적으로 편입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1990년대 교육부는 산업 사회와 노동 시장 변화를 반영하여 시장 경제 논리에 따른 대학 특성화를 장려했다. 1995년 ‘대학 교육 개혁 방안’을 마련하여 다양한 대학 모형과 특성화를 기획하고 대학 평가에 따른 연구 지원 차등화를 구상했다. 이어 1996년 ‘신경제 장기 구상-교육 부문 과제’에서 대학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기본 목표로 2020년까지 1개 대학을 세계 10위권 안으로, 3개 대학을 1백 위권 안으로, 5개 대학을 5백 위권 안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가 주도한 대학 개혁 구상은 국립대학교의 공립화·민영화, 부실 대학의 퇴출, 대학 재정 확충을 위한 기부금 유치 권장, 소수의 대학원 연구 중심 대학의 집중 육성 등 대부분이 아카데미 캐피탈리즘과 일치한다.

그러나 대학의 시장 경제화는 실용 학문의 발전, 경쟁과 성과주의의 활성화를 유도한 반면, 인문학, 사회 과학 같은 비실용 학문에 대한 외면, 단기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학문에 대한 지원을 약화했다. 특히 1990년대 초반까지 정부가 과학 기술 분야 연구비 지원을 급격하게 늘린 것과 대조적으로 인문 과학과 사회 과학 등 기초 학문 분야 지원을

소홀히 했으며, 과학 기술 분야에서도 기초 학문 영역보다는 응용 학문 영역에 지원을 집중했다. 그러자 대학 사회에서 학문에 침투하는 자본 논리에 대해 크게 논란이 일었다.

1996년 5월 본교 자연과학대학은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발전계획’을 내놓으면서 부족한 연구 기자재, 넓은 연구 공간, 그리고 적정 수를 초과한 학생 수 등 기초 과학의 열악한 연구 환경을 지적했다. 특히 자연과학대학 외부 시설 지원액은 공과대학의 30분의 1에 불과하며 기업체나 정부가 응용 학문과 같은 특정 분야만을 집중 육성해 기초 학문에 가까운 자연과학대학은 연구 여건이 나쁠 수밖에 없음을 강조했다. 또 같은 해 11월 전국국공립대학교 인문대학장협의회는 ‘인문학 제주 선언’을 발표하여 현 산업 사회에서 인문학과 인문 교육이 위기를 맞이했다고 알렸다. 1990년대 중반 기초 학문 분야 교수들은 정부가 국내 대학을 시장 경제에 따라 재편하면서 기초 학문이 소외되어 연구를 활성화하기도 전에 고사할 위기를 맞았음을 인식하고 기초 학문 분야에 지원을 늘려 달라고 정부에 적극 요구했다.

1998년 외환 위기를 겪으며 정부는 대학 연구 지원 정책에서 시장 경제 원칙을 더욱 강화했으나, 다른 한편으로 기초 학문에 대한 지원 사업과 규모를 점차 확대했다. 이로써 1990년대 초반 크게 벌어졌던 본교 단과대학별 연구비 격차는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들어 현저히 줄었다. 인문학과 과학 기술 분야 간 연구비 격차가 줄었을 뿐 아니라, 과학 기술 분야 중 기초 학문 성격이 강한 자연과학대학과 응용 학문 성격이 강한 공과대학 사이의 연구비 격차 역시 줄었다. 그러나 연구 중심 대학으로서 서울대의 사회적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 대학 구성원들의 견해 차이는 여전히 존재한다. 국가 경제와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전문 직업인을 양성해야 한다는 입장과 순수 학문 연구와 기본적 소양을 갖춘 교양인을 양성해야 한다는 입장이 양 극단에 있다.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면서 한국적 연구 중심 대학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본교는 대학의 시장 경제화라는 큰 흐름에 거스르지 않으면서 동시에 학문 분야의 고른 발전을 추구하고자 노력했다. 정부가 응용 학문에 편중 지원하는 경향이 강했던 1990년대 중반 본교는 자체 학술 연구비를 인문학 및 사회 과학 분야에 집중 지원했고, 정부의 기초 학문 지원이 비교적 늘어난 2000년대에 한국학과 통일학 분야를 특화하여 지원하였다.

교육부는 1999년 ‘창조적지식기반국가건설을 위한 교육발전5개년계획’의 고등 교육 부문에서 대학 특성화, 구조 조정, 연구 중심 대학 육성을 주요 목표로 삼았다. 연구 중심 대학으로 특성화한 본교는 이 계획에서 가장 규모가 큰 두뇌한국21(이하 BK21) 사업의 전폭적 지원 대상이 되었다. 교육부는 BK21 사업을 통해 본교에 과학 기술, 인문

사회, 대학원 전용 시설 지원을 계획하여 고른 학문 분야 지원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과학 기술 분야의 연구 지원 방식을 고스란히 인문학 및 사회 과학 분야에 적용하면서 본교 인문계 교수들이 크게 반발하였다. 결국 본교 인문대학은 공동 연구, 전국 규모 학술지 논문 출판 수에 따른 평가 등 인문계의 특성을 무시하며 지원하는 방식과 대학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BK21 사업에 불참하였다. 이 사건은 1990년대부터 지속된 대학사회의 아카데미즘 캐피탈리즘에 대한 순수 학문주의, 즉 아카데미즘의 반대로도 볼 수 있다. 인문학과 같은 순수 학문 분야에도 경쟁 체제를 도입하고 시장 경제 논리를 적용하려는 정부의 입장과 전통적 아카데미즘을 고수하려는 교수 사회가 팽팽하게 대립한 것이다.

연구 중심 대학에 대한 이상의 차이는 각 학문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다. 연구 방법으로 사어나 사고가 중요한 분야가 있는 반면, 첨단 설비와 기기가 중요한 분야도 있다. 동일하게 정부 지원을 받아 산출한 연구 결과라 하더라도 기초 학문 분야의 지식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반면, 의약학적 수요가 큰 생명 공학 분야와 산업 기술 응용 가능성이 높은 공학 분야의 지식은 사적 재산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 연구 성과가 주로 논문으로 결과를 맺을 수 있는 분야가 있는 반면 논문보다는 특허나 기술 이전, 기술적 인공물이 더 중요한 분야도 있다. 따라서 연구 중심 대학의 성격을 한 가지로 규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연구 중심 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 정책은 일률적 지원 방식이 아니라 각 학문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다원적 지원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1990년대 정부가 본격적으로 대학 개혁을 추진하고 대학 연구 지원을 확대하면서 본교는 점차 대학원 중심 대학의 면모를 갖추었다. 본교는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한국 사회의 신자유주의 강화와 대학 사회의 시장 경제화 영향을 크게 받았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대학의 기능과 사회적 역할에 관한 순수 학문주의적 입장과 신자유주의적 입장이 대립하기도 했다. 그러나 2000년대 본교는 기초 학문과 응용 학문의 동시 발전과 전 학문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우수한 연구 중심 대학을 추구하면서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고자 노력했다.

### 3) 연구 중심 대학 서울대의 성과와 과제

2000년대 본교는 여러 지표에서 국내적, 국제적으로 우수한 연구 중심 대학으로 평

가받았다. 1990년대의 진통과 노력, 변화와 개혁 속에서 꾸준히 대학원 중심 대학이라는 이상을 추구한 결과 국내 최고이자 세계적 수준의 연구 능력을 갖추었다. 특히 1999년에 시작한 BK21 사업이 과학기술논문색인(SCI) 논문 수와 같은 양적 지표를 주요 평가 항목으로 삼으면서 연구 성과 출판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본교는 2000년대에 들어 국내 연구 중심 대학을 선도하며 국제 수준의 과학 기술 논문 수와 피인용 지수(Impact Factor) 상승을 이끌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본교는 지난 10년 간 외국 대학 평가 기관의 국제 순위가 급격히 상승했다. 1996년 세계 800위권에 머물렀으나, 2004년 중국 상하이교통대학의 세계 500대 대학 평가에서 본교는 153~201위권, 같은 해 영국의 『더 타임스(The Times)』 세계대학평가팀이 발표한 세계 상위 200개 대학 중 118위를 차지하고, 2005년 『더 타임스』 순위에서는 93위로 올라섰다. 그러나 2004년 상하이교통대학과 『더 타임스』의 발표에서 본교가 100위권 안에 들지 못했다는 사실은 다시 한 번 사회적인 비난을 불러왔다. 본교가 국내 최고에만 안주한다는 비판부터, 정부의 지원을 독점하면서 그 정도나 비난까지 각종 사회적 질타를 받았다. 그러나 외국 기관의 평가 기준이 일정하지 않고, 또 배점 방식 중 본교가 손해를 볼 수 있는 내용이 많아 평가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예를 들어 상하이교통대학 평가는 노벨상 관련 부문에 전체 점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비중을 두고 있어서 노벨상 수상자가 한 명도 없는 본교의 순위가 좋을 수 없기 때문이다.

논문의 양적, 질적 지표만으로 볼 때 본교 이공계 대학은 이미 세계적으로 우수한 수준에 올랐다. 본교는 2003년 논문 피인용 횟수(Cited times)를 기준으로 이공계 대학원의 연구 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미국 소재 대학원 중 약 20위권 수준에 해당했다. 특히 수리 과학, 물리학, 생명 과학, 화학 공학, 기계 항공, 약학 등 6개 분야에서 교수 1인당 과학기술논문색인 수준의 논문 수는 1994년 미국 최상위권 대학의 74% 수준에서 2003년 151%로 증가하고, 논문 피인용 횟수도 1994~1995년 미국 최상위 대학의 35%에서 2003년 74%로 향상됐다. 특히 약학은 이 분야 미국 최상위권 대학인 캘리포니아대학교와 비교할 때 2003년 논문 수에서 3배 이상(309%), 피인용 횟수도 2배 가까이(168%) 많았다. 수리 과학 분야 역시 2003년 논문 수(160%)와 피인용 횟수(109%)에서 하버드대학교를 모두 추월했다.

자연과학대학은 2005년 『더 타임스』 세계 대학 순위에서 45위를 기록했고, 자연과학대학 자체적으로 같은 해 6월 해외 석학 평가단의 분야별 심층 실사를 실시한 결과 미국

내 20위권 수준으로 평가받았다. 공과대학 역시 2006년 해외 석학 평가를 실시한 결과 세계 10~20위 수준으로 평가받았다. 해외 석학 평가에서 본교 이공계 대학은 젊은 교수 및 연구진의 실력과 연구 역량이 우수하고 학생들의 수준이 매우 높으며, 대학의 지명도에 비해 연구 수준 역시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근 본교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국제 학술 교류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우선 1986년부터 2002년까지 본교는 해외 18개국 55개 대학과 학술 교류 협정을 체결하였으나, 2003년부터 협정 체결이 늘어나 2006년 6월 현재 32개국 102개교와 협정을 체결하였다. 또 개교 60주년과 규장각 230주년을 맞아 본교는 2006년 7월 학술 교류 협력과 한국학 연구에서 학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환수하는 차원에서 도쿄대학교로부터 『조선 왕조 실록』 오대산본 47권을 인수했다. 도쿄대학교가 소장하던 『조선 왕조 실록』은 1913년 초대 조선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일본으로 반출한 지 93년 만에 국내에 반환된 것으로, 이는 본교 학문 연구의 자주적이며 국제적인 위상을 드러낸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외형적 지표를 보면 서울대학교가 명실상부한 국제 수준의 연구 중심 대학으로 발전하였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나, 내실에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우수한 대학들은 『더 타임스』의 평가 지표와 같은 계량화한 수치를 놓고 경쟁하는 관계이다. 경쟁은 국제 인증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 수나 발표 논문의 피인용 횟수, 교수 대 학생 비율, 외국인 교수 비율, 외국인 학생 비율과 같이 외부에 드러나는 지표 지수로 별인다. 1990년대부터 한국 정부 기관과 본교는 이러한 여러 지표 지수를 높여 연구 중심 대학 달성을 주요 목표로 삼았고, 2006년 현재 어느 정도 목적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외형적 지표와 달리 학문 연구의 내용에서 자주적 학풍을 형성하고, 지성의 독립을 지켜야 하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외국 명문 대학을 추격한다는 1990년대의 전략과 달리 이제는 학문 연구의 대외 의존성을 탈피하고 자주적이고 독자적인 전통과 학풍을 세워야 한다. 또 신자유주의적 교육관이나 한국 사회 요구에 부응하는 동시에 학문과 지성의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 2002년부터 2006년 7월까지 재임한 본교 총장 정운찬의 말처럼 “대학이 이차적이고 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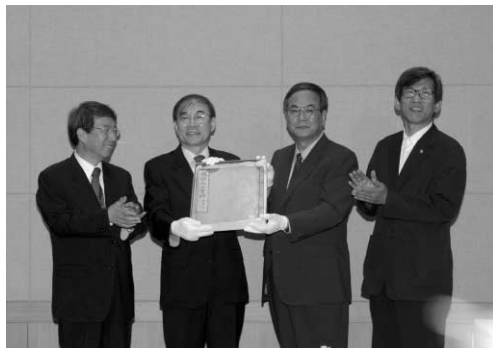


그림 4-1-2 『조선왕조 실록』 오대산사고본 인도 인수식(2006년 7월 14일) (좌부터 본교 총장 정운찬, 규장각한국학연구원장 김영식, 도쿄대 도서관장 사이고 카즈히코, 문화재청장 유홍준). 출전: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디지털 사진 자료관.

업적인 훈련을 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대학의 존재 이유가 그와 다르기 때문”이며 “대학은 직접적 효용성으로부터 물러서 진리와 연구 그 자체의 의의를 드러내는 작업을 해야 한다.”

최근 본교는 연구비 유용과 횡령, 논문 조작 등 여러 좋지 않은 사건들을 겪었다. 2005년과 2006년 연구비 횡령이나 유용 사건으로 일부 교수들이 직위 해제 이상의 무거운 징계를 받았다. 최고 과학자로 선정된 황우석은 2006년 줄기 세포 논문 조작 사건으로 교수직에서 파면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교는 제도 개선책을 여럿 내놓았다. 2005년 ‘연구감사위원회’를 설치해 연구비 관련 내부 고발을 접수하고 연구비 회계, 채용, 관리 등에 관한 직무 감찰을 실시하였다. 또 2006년 ‘서울대학교 교수 윤리 헌장’을 제정하고, 연구 부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연구진실성위원회’를 만들었다. 아래의 인용문은 ‘서울대학교 교수 윤리 헌장’ 윤리 규범 중 “II. 연구 및 학술 활동” 내용 전문이다.

## II. 연구 및 학술활동

1. 교수는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과정이 자율적 결정과 참여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되, 학교가 정한 일정한 절차와 규정을 준수한다. 특히 교수는 연구비의 수주와 집행에서 윤리적, 법적 책임과 의무를 준수한다.
2. 교수는 공동연구의 경우 연구참여, 연구비 집행, 연구결과 활용 등에서 공동연구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3. 교수는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원, 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의 권리나 인격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이들이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당한 대우를 한다.
4. 교수는 연구 및 저술활동에서 저작권 침해, 표절, 부적절한 인용, 자료의 조작 등과 같은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한다.
5. 교수는 모든 연구에서 법률 및 학교 규정과 학계에서 권장하는 기본적인 연구윤리를 반드시 준수한다.

연구비 유용이나 논문 조작 사건은 개인의 사심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 동안 외형적 지표를 지나치게 강조한 우리 사회의 구조적 요인에서도 기인한다. 외형적 지표를 강조하다 보니 교수 한 명이 어느 정도의 연구비를 유치할 수 있는지, 국제적으로 명성 있는 학술지에 논문을 몇 편이나 실었는지, 연구 결과가 사회에 어떤 이익을 가져올지만 관심을 가지고, 연구자가 얼마나 소신을 가지고 연구에 성실히 임하는지와 같은

보이지 않는 노력에는 무관심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결국 성과주의의 만연을 불렀고 과정에서 생긴 태만과 부정을 묵인했다. 그러나 이제는 연구 과제의 성실한 수행과 연구비 운영의 투명성 확보, 연구 결과의 성공뿐만 아니라 성실한 실패 역시 사회에서 인정하는 문화를 만들고, 연구 윤리 덕목을 준수하는 등의 내재적 성숙이 필요한 시기이다.

학문 연구의 내실화를 위해 본교는 지속적으로 우수한 연구 인력을 유치하고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런데도 최근까지 해외 석학들이 본교의 취약점으로 지적하는 사항은 주로 대학원생의 처우 문제이다. 이미 본교 교수 사회는 1990년대 초부터 학문 후속 세대 논의에서 대학원생 처우 문제를 계속 제기했으나, 아직까지도 대학원생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본교 대학원생은 열악한 연구 시설과 환경, 장학금 부족과 생활비 마련을 위한 과외 활동, 기술 인력이나 행정 인력 등 연구 지원 인력이 해야 할 일을 대학원생이 져야 하는 부담, 학업과 무관한 프로젝트의 과중 등 연구 중심 대학, 대학원 중심 대학의 이상과 동떨어진 환경에 있다. 1990년대부터 대학원생에 대한 장학금과 생활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늘렸으나, 2000년대 들어 대학원 지원율과 진학률은 오히려 감소하여 2004년 대학원 정원을 축소하게 되었다. 우수한 학생들의 외국행이 감소하지 않는 이유는 본교 학문 연구의 자주성과 자생력이 떨어지고 대학원생의 연구 환경을 총체적으로 개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학원 정원 축소 이후 본교는 2006년 이공계 대학원생(7천 명) 절반 이상을 기숙사에 입주시켜 연구에 몰두하도록 한다는 청사진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연구 지원 인력의 보충, 연구 시설과 환경 개선 등 학문 후속 세대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자생 박사의 우수성을 높여야 한다.



## 제2장 연구 여건의 개선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를 활성화하려면 행정적, 재정적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 연구 활동의 성격이 다원화하고 복잡해질수록 이를 뒷받침할 연구 지원 제도 역시 변화한다. 제도적 환경의 핵심은 연구를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행정 제도와 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제공하는 대내외적 연구비이다.

이 장은 연구 지원 제도와 연구비, 연구업적을 주제로 삼아 주요 연구 여건의 제도적, 수치적 변화를 고찰했다. 각 주제별 내용을 보면, 1절은 본교 연구 지원 제도의 설립과 변화를 서술했다. 초창기부터 1980년대 말까지 본교는 교무처와 연구위원회를 중심으로 연구 행정 체제를 운영했다. 전쟁 직후 설치된 연구위원회는 서울대학교 연구 활동 지원 기준과 제도를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 연구 규모가 점차 커졌고 연구 행정 전담기구 설치 필요성이 높아졌다. 1987년 본교는 발전장기계획의 일환으로 연구처를 설치하고 연구비 중앙 관리를 실시하는 등 연구 행정 합리화와 효율화를 꾀하였다. 최근에는 산학협력재단을 설치하여 연구 성과의 특허 출원과 상품화를 유인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2절은 시기별로 연구비 재원과 규모의 변화를 다루었다. 초창기부터 1970년대까지 연구 여건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본교 교수들은 대부분 소규모 개인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비 재원은 주로 문교부에 국한되었으며 연구비 수혜액은 그리 크지 않았다. 그러나



캠퍼스 종합화가 완료되는 1970년대 후반부터 과학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비 수혜 규모가 늘기 시작했고, 1990년대 들어서는 전 학문 분야의 연구비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3절은 연구 여건의 변화에 따른 교수 연구 업적 변화를 수치적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1980년대 후반 이후 본교 교수 연구 업적의 증가를 주목할 만하다. 단, 자료의 한계상 연구 업적에 대한 질적이고 역사적인 평가를 할 수는 없었다.

## 제 1 절 연구 지원 제도의 정비

### 1) 연구위원회 발족과 제도 변화

#### (1) 연구위원회 발족과 초창기 활동

국립서울대학교설립안(이하 국대안) 과동을 마무리한 1940년대 말 학내에 학문 연구를 활성화하려는 열의가 높았지만 곧바로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러한 의지는 실현될 수 없었다. 전쟁으로 전국의 주요 대학이 부산에 집결하면서 교수들 사이에서 대학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논의가 다시 활발하게 일었다. 부산 시절 본교 교육과 연구 환경은 매우 열악했지만, 대학 구성원들은 1940년대 말처럼 대학인이 학문 연구에 전념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무엇보다 전쟁 중인데도 여러모로 편의를 본 대학이 국가에 보답하는 길은 열심히 학문을 탐구하는 일이라는 세론이 높았다. 이러한 배경에서 1952년 10월 11일 본교 학술 연구 업무를 담당하던 각 단과대학 교무과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비 예산을 더 적극 활용하여 “당면한 중요 연구 사업”에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것을 논의하여 의결했다. 당시가 전쟁 시기인 만큼 당면한 중요 연구 사업이란 순수한 학술 연구라기보다는 국가에서 필요한 연구를 의미했다.

그러나 연구 사업을 중앙에서 계획적으로 추진하려면 이를 기획하고 해당 과제를 선정하며, 연구비를 배분하는 등 구체적으로 의사 결정을 할 집단이 필요했다. 그때까지 학술 연구에 관한 업무는 교무과에서 담당했으나, 당시 교무과는 다른 업무도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할 여력이 없었다. 따라서 본교 연구 사업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할 별도의 기구가 필요했고, 이에 1953년 11월 연구위원회가 발족했다. 연

구위원회 첫 모임은 1953년 11월 21일 최규남 총장 주재로 윤일선 외 8명의 연구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열렸다. 이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대학신문』 1953년 11월 30일자에 게재되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출판비는 120만환을 계상하고 연 2회 연구보고지를 인문계와 자연계 각 1권씩 발간하기로 한다. 동지 편집책임자는 고흥곤(인문계), 전풍진(자연계) 양 교수로 한다.
2. 종합연구계획에 있어 연구비지출단위를 40만환 표준으로 한다.
3. 연구위원은 교내 각 대학장이 대학별로 결정된 수의 배수단위로 추천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하도록 한다.
4. 연구비 지출대상에 있어 그 범위는 (가)국가적 긴급을 요하는 연구 (나)학문발전상 중요한 연구 (다)연구에 관한 장소 시설 기구 등을 구비하여 1954년 4월까지 연구결과 보고가 가능한 연구 등으로 한다. 단 장기연구를 요할 때에는 4월말까지 총장에게 중간보고를 제출토록 한다.
5. 서울대학교 연구위원회 구성은 윤일선(위원장), 권영대, 전풍진(간사), 유기천, 한제영, 권중휘, 장발, 조백현, 고승제 교수로 한다.
6. 각 대학별 연구비지출단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공대(2), 문리대(2), 사대(2), 농대(2), 상대(1), 법대(1), 약대(1), 음대(1), 미대(1), 수의대(1), 치대(1), 의대(2)

연구위원회의 첫 결정 사항을 보면 전후에 국가가 긴급하게 요구하는 연구에 우선적으로 연구비를 배당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연구를 위한 물적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장소나 시설, 실험 기기 등을 구비한 경우에 연구비를 지원받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도 분명하다. 새로운 기기나 시설을 거의 마련할 수 없어서 기존 설비들을 최대한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비록 절대적으로 부족한 연구비지만, 연구위원회는 단과대학의 특성과 형평성을 배려하여 연구비를 배분했다. 이는 초기 본교 연구위원회가 전 학문 분야의 고른 성장과 종합적 발전을 대학 연구의 철학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학술 연구 업무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이 없던 시절 연구위원회 출범으로 대학 학문 연구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 연구위원회는 임원 구성, 연구비 지급계획과 지급 대상 비율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하고 1954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1954년 7월 확정된 본교 연구위원회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본회는 서울대학교 연구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본 위원회는 서울대학교 교원의 학술연구를 조장하고 또 그 편의를 도모키로 목적한다.

제3조 본 위원회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내에 둔다.

제4조 본 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한 위원 약간 명으로서 구성하고 위원장은 대학원장으로서 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6조 본 위원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각 대학에서 제출된 연구 테마의 심사 결정 및 그 연구비의 배정에 관한 사항
2. 논문집 기타 학술보고서의 간행에 관한 사항

제7조 본위원회는 전조 제2항의 사업을 위하여 두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제1분과위원회(인문·사회과학)
2. 제2분과위원회(자연과학)

제8조 각 분과위원회에는 분과위원장을 둔다.

제9조 본 규정은 단기 4287년(1954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연구위원회를 대학원에 소속한 것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첫 번째, 대학보다 대학원이 학문 연구의 중심이므로 연구위원회는 대학원에 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본교 대학원은 독립된 제도와 지원 체제를 갖추지 못하여 구조적으로 대학원의 주된 기능인 학문 연구를 활성화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두 번째, 학내 연구소 활동이 전반적으로 취약했다. 1946년 8월 본교 최초의 연구소로 생약연구소(현 천연물과학연구소)가 발족했으나, 이후 15년 동안 생약연구소 이외 추가로 설립한 연구소는 없었다. 대학, 대학원, 연구소를 중심으로 연구하는 것이 지금은 당연하게 보이지만, 적어도 1950년대까지 본교에서 연구소의 존재는 매우 미약했다.

1950년대 본교는 외국의 최신 학문과 이론을 수입하여 소화하는 일을 중요한 학문 연구 사업의 하나로 삼았다. 외국서를 번역하여 출판하고 이를 대학 교육 교재로 활용하는 일이 시급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957년 2월 연구위원회에 학술 서적 출판을 관장하던 출판위원회를 통합하여 연구위원회 기능을 확충했다. 새로 편성한 연구위원회는 학내에 제출된 연구 과제 심사와 연구비 배정, 논문집과 기타 학술 보고서 출판, 번역 도서와 역자 선정, 번역 도서 출판 등의 사업을 추진했다. 이와 함께 연구위원회는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존 체제를 유지하되 산하에 연구부와 출판부를 두도록 조직을 개편했다.

본교는 연구위원회와 출판위원회를 통합하면서 교수의 연구와 학술 도서 출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자 했다. 그러나 연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커졌어도 연구 업무를 전담할 별도의 행정 부서가 없었기 때문에 교수 사회가 커다란 부담을 져야 했다. 본교는 학술 연구와 도서 출판에 관한 제반 사항의 심의 조직인 연구위원회 제도를 1970년대 초까지 큰 변화 없이 유지했다. 체제와 규정을 조금씩 바꾸기도 했지만 70년대 초까지 연구위원회를 총장 직속 자문 기구로 두고 위원장은 대학원장, 부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맡는 체제를 유지했다.

## (2) 1975년 종합화와 연구위원회 기능 확대

캠퍼스 종합화를 실현하는 1975년 전후 연구위원회 제도는 여러 변화를 겪었다. 1970년대 초반 연구위원회는 위원장을 부총장이, 부위원장을 교무처장이 맡는 체제로 승격했으며, 도서 출판에 대한 심의 업무를 상당 부분 대학 출판부에 이임하여 학술 연구에 대한 심의를 전문적으로 담당했다. 이에 따라 학칙을 전문 개정(1975년 7월 25일 규칙 제326호)하면서 연구위원회 규정을 제32조에 새롭게 구성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2조 (연구위원회) ① 서울대학교의 학술연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위원회를 둔다.

② 연구위원회는 부총장, 대학원장, 교무처장과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 약간인으로써 조직하며 위원장은 부총장이 되고 2인의 부위원장을 두되 위원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한다.

③ 연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술연구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구사업비의 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3. 연구제목, 연구자의 선정과 연구비의 배정에 관한 사항.
4. 연구결과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5. 도서출판, 학술보고서, 논문집에 관한 사항.
6. 본교내 각급연구소 간의 상호조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학술연구 및 도서출판에 관한 중요사항과 총장이 위촉하는 사항.

④ 연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연구위원회에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연구위원회의 간사는 교무처 교무과장이 된다.

이러한 연구위원회 제도 변화는 대학 사회의 학술 연구 분야에서 일어난 큰 변화를 반영했다. 우선 연구위원회 소속이 대학원에서 대학본부로 바뀐 것은 연구위원회의 기능을 대학원에 한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는 학내에서 연구를 담당하는 대학원 이외의 다른 기관, 즉 연구소의 규모와 역할이 상당히 커졌기 때문이다. 1961년 한국경제연구소(경제연구소) 설립을 시작으로 1974년까지 연구소가 총 23곳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연구위원회는 규정 제32조 3항 6호로 정한 연구소 관련 조정 사항을 업무에 포함하였다. 대학 연구 기능의 강화는 연구 활동 내용에 대한 엄정한 심사와 평가를 동반하기 마련이다. 그리하여 연구위원회는 규정 제32조 3항 4호로 정한 연구 결과의 분석 평가 업무를 맡았다.

그러나 10명 내외의 연구위원회 위원들이 규정 제32조에서 정한 모든 업무를 맡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에 1975년 캠퍼스 종합화를 계기로 본교 교수들은 학문 연구 강화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하며 별도의 연구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본교는 별도의 행정 기구를 1980년대 말에야 설치했고 그 때까지 연구위원회와 교무과가 연구 관련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체제를 유지했다.

### (3) 연구처 출범 이후 연구위원회의 위상 변화

1980년대에 연구비 규모 증가와 재원 다양화, 연구 논문집 전문화와 분화, 연구소 신설 증가 등으로 연구 관련 업무는 엄청나게 늘어났고, 이를 교무처 교무과와 연구위원회가 감당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웠다. 결국 각 연구 단위, 즉 대학원 연구실이나 연구소에서 주요 행정 업무를 맡아야 했다. 대학원과 연구소가 온갖 연구 행정 업무를 맡으면서 그 소속원이 연구 이외의 행정 업무까지 부담해야 했고, 결국 대학 전체의 연구 능력이 떨어진다는 비난이 일기 시작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87년 연구처를 설치하여 학술 연구 업무를 전담케 했다. 연구처 출범으로 대학원, 연구소뿐만 아니라 연구위원회의 업무 부담을 크게 줄였다. 출범 당시 본교 전체 연구 예산을 관리하고 연구 결과의 출판을 담당하던 연구위원회는 이제 연구 관련 제도를 조정하기 위한 심의 및 자문 기구로 남았다. 이러한 연구위원회 위상 변화는 대학의 성장과 발전 과정에서 매우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

연구처 설치 이후 연구위원회 업무는 규정상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단지 위원장에

연구처장을 임명하는 등 연구처 출범으로 몇 가지 항목상 변화가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2001년 8월 31일자로 학칙을 전문 개정하면서 연구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제32조에서 제40조로 변경하였으나 내용상 큰 변화는 없었다. 2004년 5월 12일자 본교 학칙상 연구위원회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40조(연구위원회) ① 학술연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위원회를 둔다.

② 연구위원회는 교무처장·연구처장·기획실장·연구부처장과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약간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연구처장이 된다.

③ 연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술연구의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구사업비의 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3. 연구제목, 연구자의 선정과 연구비 배정에 관한 사항
4. 연구결과의 분석 평가에 관한 사항
5. 학술보고서·논문집 등에 관한 사항
6. 연구소간의 협력 조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학술연구에 관한 사항

④ 연구위원회에 분과위원회와 특임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연구위원회의 간사는 연구진흥과장이 된다.

최근 연구위원회는 자문 기구로 대학 학문 연구의 원활한 발전을 위해 연구 관련 제도들을 개선하고자 노력했다. 예를 들어 2002년 연구원 임용 규정을 개정하여 연구원의 자격과 임용의 폭을 넓혔고, 2003년 새로 생겨나는 각종 연구 센터들을 제도적으로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과학·공학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통칙'을 개정했다. 이외에도 연구위원회의 심의와 자문 역할은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이제 연구처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운영하므로 구체적인 학술 연구 지원 내용을 다음 연구처 관련 서술에서 살펴보겠다.

## 2) 연구처 설치와 연구 행정 합리화

### (1) 1987년 연구처 설치

서울대학교 학술 연구 업무는 1950년대 말까지 교학국 교무과에서, 1959년 1월 13일 이후 교무처 교무과에서 담당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53년 연구위원회가 발족하면서 교무과와 연구위원회는 상호 보완적으로 연구 관련 업무를 맡았다. 그러다가 본교가 ‘종합10개년계획’을 구상하는 1960년대 말부터 교수들은 전문적으로 연구 행정 업무를 전담할 별도의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10개년 종합계획을 서두르고 있는 서울대에 종합계획 그 자체를 위한 기구 확장뿐만 아니라 한국 제일의 서울대의 알찬 발전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기구 확장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비등하다. 이러한 기구 확장의 필요성은 구체적으로 현재 교무과에 소속돼 있는 교수연구사업업무를 독립시켜 「연구과」로의 확장 발족을 지적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근거로는 ① 교수들의 연구활동을 광범위하게 지원하고 ② 각종 연구비를 지급하는 기관과의 행정적인 차원의 사무를 관장하고 ③ 개인활동으로 인해서 난맥상을 띠우고 있는 연구사업을 가능한 한도 안에서 통계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이다. (『본부 기구 확충 시급, 연구과, 종합시설과 등 설치돼야』, 『대학신문』 1968. 9. 30)

이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교수들은 1960년대 말부터 연구 관리 행정을 독립적으로 운용하고 연구 지원을 합리화하려고 했다. 이는 1960년대 후반부터 연구비 지원이 증가하기 시작하고 연구 과제 역시 증가하여 이를 일률적으로 관리·운영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합화 이후에도 본교는 연구 행정 기구를 설치하지 못하고 기존 연구위원회와 교무처 중심으로 연구비 관리·운영 체제를 유지했다.

종합화 이후 연구비 재원이 다양해지고 연구비 총 규모가 커져서 연구 과제 선정부터 관리까지 모두 연구위원회와 교무처가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미 1960년대부터 급속하게 증가한 연구소들은 개별적으로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용역 연구를 대부분 직접 관리했다. 1970년대 말부터 한국과학재단과 과학기술처의 대학(원) 연구비 지원이 늘어났지만, 문교부 학술 연구 조성비 위주로 연구비를 관리하던 중앙 행정 기구에서 이를 추가로 관리하기 어려워 각 대학(원)이 새로 지원받은 연구비를 개별적으로 관리했다. 대학 내 연구소와 단과대학(원)이 연구비를 직접 관리함에 따라 대학본부는 본교에 들어오는 연구비의 총 집계조차 할 수 없었다. 이에 본교는 연구 관리 운영 체제를

일대 혁신할 필요를 절감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1980년대 중반부터 연구비 중앙 관리 기구를 독립 설치하기로 논의하고, 이를 발전 장기 계획의 일환으로 구체화했다. 1987년 ‘서울대학교 발전장기계획(1987~2001년)’을 공표하고 ‘연구 중심의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실천해 갔다. 발전장기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가장 먼저 연구처를 신설하는 일에 착수했다. 본교는 연구처를 신설해 이전까지 교무처 소관이던 연구 지원 행정 분야를 독립시키고, 대단위 연구 사업을 기획 추진하며, 각종 연구 관련 행정 업무를 일괄 처리할 체제를 갖추었다.

1987년 7월 1일 국내 대학 최초로 출범한 본교 연구처는 연구 진흥, 연구 지원, 연구 관리와 연구 평가 업무를 시작했다. 연구처는 이때 국내 대학 연구 행정의 효시가 되는 각종 업무를 기획하고 개발했다. 그중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은 교수 연구 업적 전산화와 연구 업적집 발간, 국제 학술지 발간, 발전기금 연구 과제 선정과 관리, 규장각 자료를 중심으로 한 한국학 대형 연구 사업 실시, 세계 각 지역 연구를 담당하는 지역종합연구소 설치와 연구동 건축, 각종 공학계 공동 연구소 설치와 연구동 건축, 연구 기기 구입을 위한 차관 도입, 연구용 서적과 시약, 기자재 수입 대행 업무 실시, 연구소 설치와 운영에 대한 규정 정비 등이었다.

비법정 대학 기구로 출범한 연구처를 더욱 체계적인 연구 지원 조직으로 만들려면 공식 기구로 법정화해야 했다. 본교는 국립 기관이기 때문에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설치령을 개정해야 연구처를 법정 조직으로 만들 수 있다. 결국 1989년 10월 28일 ‘서울대학교설치령’ 개정안(대통령령 제12831호)에 의거하여 연구처 법정화를 최종 확정하였다. 이것으로 본교는 연구의 양적 질적 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고, 연구 진흥과 연구 지원 활동을 더욱 체계화했다.

## (2) 연구 행정의 합리화

연구비와 연구 과제의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던 1980년대 전까지 연구비는 각 단과 대학과 연구소 소속 교수나 연구원이 직접 집행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 행정 업무를 담당할 부서를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크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의 연구비 지원액이 급증함에 따라 본교 연구비 수혜 규모가 증가하고, 또 연구비 지원 방식이 소규모 개인 연구자 지원에서 대형 과제, 공동 연구 지원 위주로 점차 전환함에 따라 연구 관련 행정 업무 역시 복잡해졌다.



연구처는 연구 관리 행정의 합리화를 위해 연구비 중앙 관리 제도와 간접 연구 경비 제도를 도입했다. 본교는 1991년 11월부터 15개월 간 연구비 중앙 관리와 간접 연구 경비 제도에 관해 연구하고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비 관리 규정과 세부 지침을 제정하여 1993년 2월부터 본교 전체 차원에서 통일된 ‘서울대학교 연구비관리규정’을 시행했다. 이 규정은 연구비 관리를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해서 대외적인 공신력을 제고하고, 연구비 관리와 관련한 교수들의 시간적·행정적·법률적 부담을 덜어 주며, 광범위하게 시행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던 간접 연구 경비에 대한 장치를 제도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관리 방침을 제정했다. 최근까지 몇 차례에 걸쳐 개정된 서울대학교연구비관리규정의 총칙 부분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서울대학교연구비관리규정’ 중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의 연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비 및 간접연구경비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구비”라 함은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비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에서 본교의 교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연구수행 경비를 말한다.
2. “간접연구경비”라 함은 연구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비 중에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이 징수한 경비 또는 교원이 직접 납부한 경비와 지원기관에서 연구비에 부수하여 간접연구경비의 명목으로 별도로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연구비 및 간접연구경비의 관리는 지원기관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관리기관 및 지출기관) ① 연구비 및 간접연구경비를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비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과 연구비지출기관(이하 “지출기관”이라 한다)을 둔다.

- ② 관리기관은 연구비 및 간접연구경비 등의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 ③ 지출기관은 관리기관의 업무 중 연구비 지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④ 관리기관 및 지출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이 규정은 이 외에도 연구비를 관리 기관에서 일괄 관리할 것, 개인 수혜 연구비(비경유)도 관리 기관에 신고할 것, 기관별로 일정 비율의 간접 연구 경비를 징수하고 공통 경비를 운영할 것, 연구비의 연구 목적 외 개인 용도 지출을 불허할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표 4-2-1〉 연구처 학술 활동 지원 현황(1998~2004년)

(단위: 백만 원)

연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국제 학술 회의 참가 경비	413	654	382	582	627	845	1,037
국제 학술 회의 개최 경비	142	199	178	200	200	345	277
외국인 저명 학자 초청 경비	3.8	11.7	37	50	70	85	119
외국 학술지 논문 게재료	88	141	70	93	74	162	177
인문·사회계 해외 연수	398	420	341	330	370	320	310
집담회 개최	-	-	-	114	120	164	182

출처: 『서울대학교 백서』, 각년판과 『학사운영협의회자료』, 각년판에서 작성.

2006년 현재 본교 연구비 관리 제도는 연구처와 각 단과대학 연구관리 전담기구의 이원적 중앙 관리 형태로 정착했다. 연구처가 연구 계약을 체결하고 모든 연구비는 연구처를 경유하지만 실질적인 연구비 관리 운영은 각 단과대학이 담당한다. 2001년부터 과학기술부, 농림부, 환경부 등 주요 국가 연구 지원 기관이 연구비 카드제를 도입하면서 현재 연구비 중앙 관리 제도에 연구비 카드제를 편입하여 운영하는 중이다. 연구비 중앙 관리 시스템 정착으로 연구비 사용의 투명성을 더했으며, 연구비 관리 업무의 효율성과 연구비에 대한 각종 통계 자료의 신빙성을 높였다.

연구비 중앙 관리 이후 간접 연구 경비를 교내 학술 활동 지원비에 추가하여 발전기금과 함께 학내 연구 지원 사업에 큰 도움을 주었다. 교내 학술 활동 지원비는 본교 연구비 총액과 비교하면 상당히 적은 금액이지만 본교를 ‘세계 수준의 종합 연구 대학’으로 만드는 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업 내용은 주로 학술 대회 개최, 국제 학술 대회 참가, 국제 학술지 논문 게재, 저명 외국 연구자 초청, 해외 연수 등이며, 이를 통해 연구자들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기여한다. 〈표 4-2-1〉은 최근 연구처의 주요 학술 활동 지원 현황이다. 이 표를 참조하면 여타 지원 사업보다 국제 학술 대회 참가와 저명 학자 초청 경비 지원이 해마다 크게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연구처의 연구 지원 사업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은 1988년 10월부터 국내 대학 최초로 실시한 교수 연구용 시약과 기자재 수입 대행 업무이다. 이 업무는 교수가 연구비로 외국에서 연구용 기기와 시약을 구입하고자 할 때 수입을 위한 제반 절차, 즉 신용장 개설, 주문, 면세, 통관, 배달, 환전, 송금 등의 업무를 일괄 대행하는 것이다. 연구처는 외국산 시약과 연구 기자재 등을 구입할 때 복잡한 수입 업무를 대행하는 편의를 제공할 뿐 아니라, 외자 구매와 통관 관세 면제를 통해 비용 절감 혜택을 준다. 이에 따라 연

구 용품 구입에 따르는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수입에 관련된 잡무로 교수와 대학원생이 시간을 낭비하는 일을 줄여 줄 뿐만 아니라 연구비도 절감할 수 있다. <표 4-2-2>에 1988년부터 2004년까지 연구처의 학술 연구 용품의 수입 대행 업무 실적을 정리했는데, 시약 수입 대행은 1999년부터 대폭 감소하는 추세나, 기자재 수입 대행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1987년 발전장기계획의 첫 실천 사업으로 출범한 연구처는 서울대학교가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진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연구처는 연구비 중앙 관리부터 학내 여러 연구지원사업까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연구 행정 합리화와 효율화를 이루었다. 최근 본교 교수들이 연구 업적에서 세계적 우수성을 인정받고 본교가 세계 최고대학의 순위에서 가파른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대학 연구 활동에 대한 보이지 않는 제도적 지원과 노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표 4-2-2> 학술연구용품 수입대행업무 실적(1988~2004년)

(단위: 백만 원(천))

연도	시약	기기	합계
1988	101(684)	80(12)	181
1989	180(1,078)	494(84)	674
1990	261(1,212)	972(111)	1,233
1991	328(1,286)	2,391(158)	2,719
1992	443(1,473)	1,514(171)	1,957
1993	480(1,572)	1,426(203)	1,906
1994	559(1,693)	1,920(230)	2,479
1995	727(2,665)	2,996(266)	3,723
1996	735(2,824)	2,901(232)	3,636
1997	733(1,891)	2,955(180)	3,689
1998	682(1,794)	2,930(135)	3,612
1999	172(339)	3,875(266)	4,047
2000	172(255)	4,639(334)	4,811
2001	136(152)	6,213(318)	6,349
2002	80(44)	5,616(375)	5,696
2003	250(63)	4,881(316)	5,131
2004	124(120)	6,482(334)	6,606

출전: 『서울대학교 백서』, 각년판과 『학사운영협의회자료』, 각년판에서 작성.

### 3)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재단

2002년 우리나라는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산업계로 확산하고 대학 연구자의 연구개발 의욕을 높이기 위해 기술이전촉진법을 제정 및 개정했고, 특허법 등 주변 법 역시 개정했다. 기술이전촉진법은 국가 소유이던 국 공립 대학의 지적 재산을 각 대학의 기술 이전 전담 조직에 귀속하고, 전담 조직을 통해 직무 발명에 대한 특허를 내도록 했다. 정부는 미국에서 1980년에 제정한 베이-돌 법(Bayh-Dole Act)의 취지를 따라 지식과 기술의 산학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기술이전촉진법을 마련했다. 일반적으로 베이-돌 법은 1980년대 미국 대학의 연구 성과를 특허를 통해 상업화하도록 촉진했고, 이러한 활동으로 1990년대 미국이 호황을 누렸다고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교는 기술 이전 전담 조직 ‘재단법인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재단’(이하 산학협력재단)을 2003년 1월 발족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서울대학교지적재산권 규정’을 제정했다. 이 규정은 직무 발명을 학내 구성원이 학내 시설과 인력을 활용해 창작한 발명으로 규정하고, 학내 기술 이전 전담 조직을 설치하며, 직무 발명과 특허 이전 수익을 일정 비율에 따라 배분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

현재 산학협력재단은 기술 이전, 발명 평가와 권리화,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한 소송과 권리 보호, 창업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또 재단은 기술 이전 체계를 과학적, 효율적으로 만들어 수행 능력을 극대화하고, 단순한 중개 알선 위주의 소극적 활동에 그치지 않고 기술 가치 평가, 수요 시장 조사, 금융 지원, 법률 지원 분야까지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산학협력재단은 대학의 연구 결과를 실용화하도록 응용 분야의 정보를 제공하며, 고수익이 예상되는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해 기초 연구에 많은 투자를 할 계획이다. 또 응용과 개발 연구 결과를 상품화하기 위해 연구 시작 단계부터 기술 동향과 시장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학제 간 연구를 통한 복합 기술 생산을 위해 <그림 4-2-1>과 같은 연구 채널(Research channel)을 만들 계획이다.

본교 산학협력재단 출범은 한국사회에서 대학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이 크게 변화했음을 반영한다. 전통적으로 대학은 고등 교육을 통해 후대를 양성하는 기관이었고 대학에서 만들어진 지식은 논문을 통해 공개되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전세계적인 신자유주의와 학문의 자본주의화가 심화되어 대학의 사회적 역할이 크게 변화했다. 대학 교육의 목표를 교양인의 양성에서 직업인의 양성으로, 대학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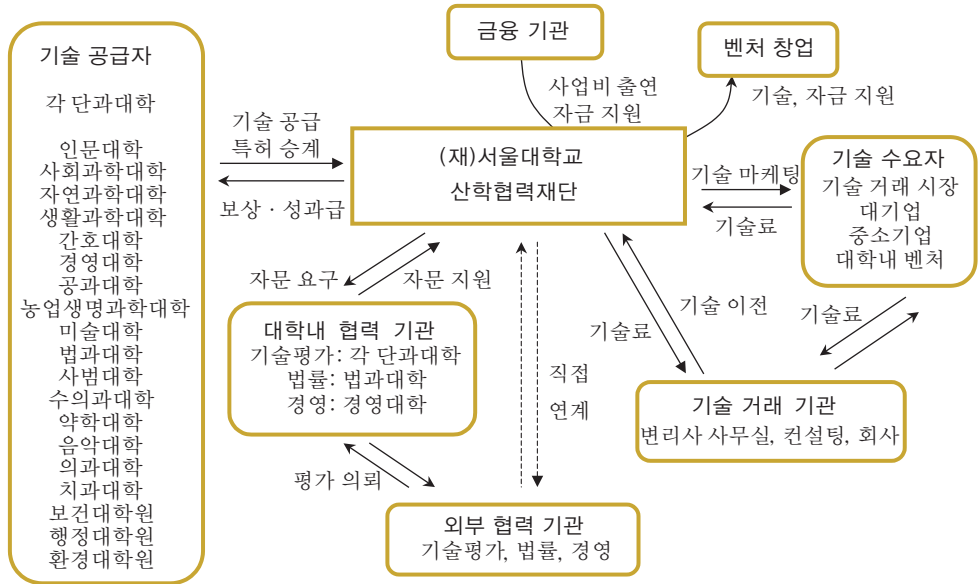


그림 4-2-1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재단의 연구 채널. 출전: 『서울대학교 백서 (2002-2003)』, 107쪽.

결과물을 공공재에서 시장 경제적 상품으로 인식하는 풍토가 강화된 것이다. 산학협력 재단은 본교 연구자의 연구 업적 중 상품화가 가능한 결과물을 특허로 출원하고 기술 수요자에게 공급한다. 또 특허 출원이나 기술공급으로 인한 수익을 연구자와 학교가 적절하게 배분한다. 이제 한국사회에서 서울대는 온전한 공익적 기관에서 벗어나 부분적으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 지식 공장의 모습을 띠는 것이다.

## 제 2 절 연구비 재원과 규모

### 1) 초기 연구비 지원(초창기~1975년)

초창기부터 캠퍼스 종합화(1975년)까지 서울대학교 교원 연구비 지원의 주요 특징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시기별 주요 연구비 재원은 1960년대 초까지 주로 국고에서 지원하는 본교 예산이었고, 이후 1975년 종합화까지는 문교부에서 지원하는 학술연구 조성비였다. 두 번째 특징은 이 시기 주요 연구비 재원이 국고-문교부에 한정되었다는 점이다. 세 번째 이 시기 동안 연구비 총 규모가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나 당

시 물가상승 등을 고려한다면, 전반적으로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다. 초창기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를 초기 연구비 지원 시기로 정하고 재원별로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자.

### (1) 학술 연구비

본교에 연구비를 지급한 것은 부산에서 ‘서울대학교 연구위원회’를 구성한 1953년부터였다. 연구위원회는 주로 국고에 편성한 본교 예산 중 학술 연구비를 바탕으로 교수들의 연구를 지원했다. <표 4-2-3>에 1953년부터 1964년까지 본교 예산에서 지원한 학술 연구비 지급 상황을 정리했다. 학술 연구비는 1964년까지 지급했으나 1966년부터 문교부 학술 연구 조성비에 통합해 폐지하였다.

1950년대 연구위원회는 학문 분야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연구비를 배분했다. 시기에 따라 연구비 지원 방식이 여러 차례 바뀌었으나, 연구비 총액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형평성과 공정성에 따른 연구비 지급은 매우 중요한 원칙이었다. 연구위원회는 1953년 연구비 지원 단위를 단과대학으로 정했으나, 1954년부터 인문계와 자연계 두 계열로 지원 단위를 구분했다. <표 4-2-3>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인문계와 자연계의 지원 단위 비율은 1 : 2 정도였다. 또 연구위원회는 초기에 인문계와 자연계의 단위당 연

<표 4-2-3> 본교 예산 중 학술연구비 지원 현황(1953~1964년)

(단위: 원)

연 도	연구비 지원 단위 (인문계/자연계)	지원 총액
1953	17(5/12)	476,000
1954	17(6/11)	477,000
1955	15(4/11)	418,070
1956	-	-
1957	15(4/11)	229,398
1958	17(5/12)	364,950
1959	14(4/10)	364,950
1960	20(6/14)	701,800
1961	18(6/12)	554,000
1962	29(4/25)	2,045,000
1963	29(4/14)	1,864,000
1964	17(6/11)	1,675,000

비고: 1. 당시 화폐 단위가 ‘환’인 경우 1/10로 절하하여 ‘원’으로 기록했다.

2. 1956년에는 연구비가 전혀 지급되지 않았음.

출전: 『연구 조성비에 의한 연구업적 개요』, 153쪽, 『서울대학교 30년사』, 156쪽과 『서울대학교 40년사』, 239쪽에서 작성.

구비 금액을 동일하게 정했으나, 1955년부터 인문계보다 자연계에 더 많은 금액을 할당했다.

1960년대 초까지 본교 연구비 총액은 당시의 물가 상승률이 해마다 20~80% 정도로 높았기 때문에 해가 갈수록 부족했다. 실제로 교수들이 희망하는 연구비 금액과 실제 지급한 금액 사이의 격차는 매우 컸다. 예를 들면 1962년 연구위원회가 연구비 신청을 받은 것은 연구 과제 신청 98건에, 연구비 신청액은 6,360만 원이었는데 그 해의 국고 지원 연구비 예산액은 270만 원으로 신청액이 예산액의 23배를 넘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구비를 관장하던 연구위원회는 연구비 신청자 중에서 지급 대상을 선발하여 적은 액수나마 나누어 배정해야 했다. 당시 연구위원회의 심사 기준은 첫째 작년 도에 연구비를 받지 않은 자, 둘째 금년도에 학교 밖에서 연구비를 받지 않은 자, 셋째 과거 연구비의 수혜자로서 보고서 제출자, 넷째 연구 경력과 연구 능력이 우위인 자, 다섯째 경제 개발과 지도 이념의 천명과 관련이 깊은 자, 여섯째 협동적 연구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원칙에 따라 1962년도 연구비를 지급했는데, 지급액은 국고연구비 예산액 270만 원 가운데 논문집 인쇄비 66만 원을 제외한 204만 원이었다.

이와 같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연구비로는 도서 구입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고, 특히 두세 명이 공동으로 연구하는 경우가 많은 자연 과학 분야는 자료 수집조차 하기 어려웠다. 이에 전후 복구 사업을 거의 완료한 1960년대 대학 사회는 교수의 연구 수당과 연구비를 증액해 달라고 정부에 적극적으로 요청했고, 문교부는 학술 연구 조성비를 지원해 주었다. 1963년부터 문교부가 학술 연구 조성비를 지원하면서 본교 예산에서 지급하던 학술 연구비를 1966년에 폐지했다.

## (2) 학술 연구 조성비

1963년 문교부는 교수 개인과 집단 연구 지원뿐 아니라 학회와 연구 기관의 연구 활성화를 목표로 학술 연구 조성 제도를 시행했다. 이 제도를 실행하면서 예산에 학술 연구 조성비를 편성하여 본교 교수의 연구 활동에 큰 도움을 주었다. 1963년부터 2년 간 학술 연구비와 학술 연구 조성비 이원 체제로 국고 지원 연구비를 지급했으나 1966년 이후 학술 연구비를 폐지하고 학술 연구 조성비로 단일화했다.

학술 연구 조성비를 지급한 첫 해 문교부 심의회는 전국 국·공·사립대학교의 전임 강사 이상의 교수가 신청한 841건의 연구 과제 가운데 126건을 학술 연구 조성비의 지급 대상으로 확정했고, 총 1,724만 8천 원의 연구비를 지급했다. 서울대학교는 237건의

〈표 4-2-4〉 문교부 학술연구구성비 지급 상황(1963~1975년)

(단위: 건, 천 원)

연도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건수	41	28	-	120	37	62	163	134	249	280	267	216	145
금액	6,382	2,182	-	17,000	4,900	23,762	87,700	76,875	96,400	104,000	134,000	108,140	81,000

출전: 『서울대학교 30년사』, 347, 352-353쪽에서 작성.

신청 건수 중 41건이 채택받아 총 연구비 638만 2,157원을 받았다. 이 당시 연구비 최고 수령액을 기록한 연구 과제는 이민재 교수의 ‘한국산 한천 원조에 대한 연구’로 35만 원을 지급받았다. 문교부는 학술 연구 조성비를 2회로 나누어 지급했는데, 학술 연구비와 마찬가지로 연구비를 지급받은 사람은 1년 이내에 연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표 4-2-4〉에서 보듯이 1964년도 학술 연구 조성비의 지급 액수는 전년도에 비해 약 1/3로 격감했고, 1965년은 아예 학술 연구 조성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정부는 1965년도 예산에서 연구비 전액을 삭감하고 그 대신 소액의 연구 수당을 추가 경정 예산안에 책정했다. 이처럼 연구비 지원이 줄어들자 본교는 부득이 변칙적으로 기성회비의 일부를 연구 조성비로 전용했으나 연구비는 여전히 부족했다.

그러자 1965년 3월 6일 본교 문리과대학 교수들은 긴급 교수 회의를 소집하고 「대학의 올바른 건설을 위하여 대통령과 국민에게 호소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수들은 이 성명서에서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확고한 보호와 육성이 뒷받침해야 한다며, 연구를 계속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조성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이러한 대학 측의 요청을 반영하여 1966년 학술 연구 조성비 지급을 재개했다.

1966년 문교부는 학술 연구 조성비를 지급하였지만 당시 20만 원 내외의 연구비는 실제로 연구비라기보다 생활 보조비에 불과했다. 이에 1968년 7월 본교 교수협의회는 「서울대학교 연구비 책정 및 국립대학교 교원 교재 연구 수당 증액에 관한 건의서」를 채택하여 문교부 당국에 제출했다. 이 건의서는 구미 대학의 경우 연구비가 대학 총 예산의 30~40%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서울대학교 종합10개년계획에 계상한 연구비 연 3억 원을 동 계획의 1차 연도인 1969년 예산에 책정하여 줄 것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교수협의회 건의 사항이 문교부의 무성의한 태도로 명확한 해결을 보지 못하자, 1969년 3월 교수협의회는 요구 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연구 논문 신청을 거부하겠다는 결의 사항을 발표하여 문교부와 날카롭게 대립했다. 이후 동년 5월 문교부는 1969년도 학술 연구 조성비를 1968년도의 2,300만 원에 비해 3.5배 이상



〈표 4-2-5〉 학문 분야별 학술연구조성비 지급 상황(1966~1972년)

(단위: 건, 천 원)

계열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일반 과학계	14	1,939	2	289	12	4,990	17	9,500	24	12,000	26	10,400	32	15,900
공학계	53	6,894	-	-	5	1,780	31	15,500	13	6,500	26	10,400	29	15,000
농학계	6	800	8	976	7	3,000	22	11,000	14	13,500	19	13,100	24	18,600
의·치·약학계	22	4,519	8	1,900	12	5,463	29	16,500	24	12,000	59	24,500	61	34,000
체육학계	-	-	-	-	-	-	1	500	1	500	6	2,000	5	2,300
어문학계	-	-	1	100	4	1,170	10	4,000	13	5,200	30	9,300	37	14,800
인문 과학계	-	-	1	120	8	2,571	14	13,700	15	9,200	26	7,800	17	7,800
사회 과학계	23	2,647	8	585	9	3,288	29	11,700	23	15,175	37	12,600	54	23,200
예술계	2	200	9	930	5	1,500	17	4,800	7	2,800	20	6,300	21	8,000

출전: 『서울대학교 50년사』, 352쪽.

으로 증가한 8,700만 원으로 책정하여 발표했으며, 이로써 문교부와 서울대학교 교수 사회는 연구비를 둘러싼 대립을 끝냈다.

〈표 4-2-5〉와 〈표 4-2-6〉은 학문 분야별, 단과대학(원)별 문교부 학술 연구 조성비의 지급 상황이다. 비록 연도별로 약간 차이가 있지만, 특정 학문 분야를 제외하지 않고 연구비를 비교적 고르게 지원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 서울대학교 학술연구재단 발족과 연구비 지원

1967년 2월 본교는 학술 연구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문교부의 인가를 받아 재단법인 서울대학교 학술연구재단을 발족했다. 학술연구재단은 학술 연구를 위한 연구비와 보조금 지급, 학술 연구를 위한 장려금 지급, 학술 논문과 문화 향상 발전을 위한 도서 출판, 학술 연구를 위한 외국인 초청 경비 지급 등의 사업을 했다. 임원진은 이사장, 부이사장, 상임 이사와 이사 5인 이상, 감사 2인으로 구성했다. 재단은 1968년부터 1976년까지 총 336건의 연구 과제에 약 11,700만 원의 연구비를 지급했는데, 이는 연평균 약 40건에 1,300만 원가량을 지급한 셈이다.

### (4) 기타 연구비

본교는 문교부 학술 연구 조성비나 학술연구재단 연구비 외에도 정부 각 기관과 각종 문화 재단, 외국 재단에서 연구비를 받았다. 우선 원자력원은 1961년 본교 교수 21명

〈표 4-2-6〉 단과대학별 문교부 학술연구조성비 지급 상황(1973~1974년)

(단위: 건, 천 원)

단과대학(원)	1973		1974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공과대학	32	6,000	30	14,250
농과대학	30	23,000	27	12,825
문리과대학	44	19,000	37	15,105
미술대학	9	3,600	7	3,040
법과대학	10	4,000	6	2,660
사범대학	28	12,100	24	10,160
상과대학	12	4,800	9	3,420
약학대학	7	3,500	6	2,850
음악대학	15	6,000	11	4,560
의과대학	33	16,500	33	15,675
치과대학	13	6,500	14	6,650
가정대학	3	1,500	3	1,425
교양과정부	17	7,500	18	7,345
경영대학원	1	400	1	380
교육대학원	2	800	2	760
보건대학원	3	1,500	4	1,900
신문대학원	3	1,200	3	1,140
행정대학원	7	2,800	4	1,520
생약연구소	2	1,000	2	950
어학연구소	2	8,000	2	760
학생지도연구소	1	400	1	380
환경대학원	-	-	1	380
계	274	130,100	245	108,135

비고: 건수와 금액의 합계에서 〈표 4-2-4〉와 약간 차이가 있으나 원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그대로 인용했다.

출전: 『서울대학교 30년사』, 353쪽.

(의과대학 12명, 약학대학 1명, 공과대학 3명, 문리과대학 3명, 농과대학 1명, 사범대학 1명)에게 총 276만 원의 원자력 연구비를 지급했다. 이와는 별도로 원자력원은 의과대학 교수들의 연구를 돕기 위해 ‘교수 장학금 제도’를 제정하여 진병호 교수 외 16명에게 총 70만 원의 연구비를 지급하고, 또 각 분야별 위촉 연구비와 위탁 연구비를 지급했다. 원자력원은 1962년 본교 교수 19명에게 총 140만 원을 제공한 후 연구비 지급을 마감했다.

〈표 4-2-7〉 서울대학교 학술연구재단 연구비 지급 상황(1968~1976년)

(단위: 건, 천 원)

연도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계
건수	24	55	64	55	30	29	27	26	26	336
금액	3,400	11,600	16,550	16,440	13,270	15,785	15,430	11,700	13,000	117,175

출전: 『서울대학교 30년사』, 347, 355쪽에서 작성.

〈표 4-2-8〉 과학기술처 조사·연구개발 사업비 지급 상황(1967~1970년)

(단위: 건, 원)

연도/금액 계열	1967		1968		1969		1970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일반 과학계	2	1,250,400	7	5,782,042	2	2,300,000	3	2,565,000
공학계	2	3,245,850	7	6,181,798	5	8,118,857	8	8,900,000
농학계	-	-	4	2,291,332	1	1,496,800	4	2,973,410
수산·해양학계	1	1,389,530	-	-	-	-	-	-
의·약학계	-	-	6	8,798,503	2	3,690,892	5	6,400,000
사회 과학계	-	-	-	-	1	1,000,000	-	-
계	5	5,885,780	24	23,053,675	11	16,606,549	20	20,838,410

출전: 『서울대학교 30년사』, 361쪽.

1963년부터 1966년까지 정부 각 기관이나 주요 기업체에서 지원한 연구비는 부정기적이거나 단기적이었고 액수도 크지 않았다. 그러나 1967년 이후 과학기술처가 조사·연구 개발 사업비를 지급하면서 상황이 조금씩 나아졌다. 과학기술처는 1967년에 처음으로 일반 과학, 공학, 수산·해양학 계열의 연구 과제 5건에 대해 약 590만 원을 지급했다. 연구 과제 1건당 약 120만 원 정도의 연구비를 지원한 셈인데 이는 다른 연구비에 비해 액수가 월등히 많은 편이어서 교수들의 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지원 분야를 주로 과학, 공학, 농학 계열로 한정된 과학기술처 조사·연구 개발 사업비 지급 상황은 〈표 4-2-8〉과 같다.

한편 국내 문화 재단 중 성곡문화재단과 삼성문화재단이 본교 교수에게 연구비를 지원했다. 성곡문화재단은 1969년부터 연구비를 지원했는데, 다른 연구비가 이공 계열과 의약 계열 위주로 지원한 것과 달리 인문학과 사회 과학, 즉 사학, 철학, 경제학, 법학 등의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학문 분야 간 지원의 불균형을 해소했다. 본교에는 1974년까지 총 76건의 연구 과제에 약 2,500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하는데, 시기에 따라 지원 건수와 금액은 감소했다(〈표 4-2-9〉 참조).

〈표 4-2-9〉 성곡문화재단 연구비 지급 상황(1969~1975년)

(단위: 건, 만 원)

연도 계열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어문학	3	95	3	100	8	240	-	-	1	40	2	100	1	50
인문과학	5	150	10	305	2	60	1	35	-	-	-	-	-	-
사회과학	11	375	10	320	7	210	6	180	4	160	3	150	2	100
계	19	620	23	725	17	510	7	215	5	200	5	250	3	150

출전: 『서울대학교 30년사』, 362쪽.

삼성문화재단은 1972년부터 중앙일보사 부설 동서문제연구소와 제휴하여, 동서 문제를 중심으로 한 인문학과 사회 과학 분야에 연구비를 지원했다. 삼성문화재단은 1972년 3건의 과제에 120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했고, 1973년에는 5건의 과제에 250만 원을 지원하여 인문학과 사회 과학 분야의 학문 연구에 큰 도움을 주었다.

국내의 각종 연구비는 개인 연구나 2, 3명 내외의 공동 연구에 지급했으나, 외국 재단이나 외국 기관은 특정 연구 기관이나 특정 사업에 연구비를 지급했다. 1963년 미국 농무성은 농과대학 백운하 교수의 '농학에 이익을 주는 딱정벌레의 연구'에 371만 원의 연구비를, 같은 대학 이창복 교수의 '한국 농업에 이용될 수 있는 한국산 식물의 조사 연구'에 4만 6천 달러의 연구비를 지원했다. 미국 농무성의 연구비 지원은 비록 2건에 불과했지만, 연구비가 월등히 많으며 연구 계약 기간이 5년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그 밖에도 미국 하버드대학교의 연경학회가 동아문화연구소에 연구 보조비를, 아세아재단에서도 학생지도연구소에 보조비를 제공했다.

## 2) 연구비 확충과 다각화(1975~1980년대 말)

### (1) 종합화 이후 연구비 확충과 재원의 다각화

캠퍼스 종합화를 실현한 1975년부터 1980년대 말까지 본교에 지원한 연구비의 재원과 규모는 크게 변화했다. 우선 종합화 이후 총 연구비가 급격히 증가했다. 이전까지 본교가 지원받은 학술 연구비는 최대 1억 원 정도였으나, 종합화 직후에는 3억 원에서 10억 원이 넘는 액수로까지 급증했다. 교수 봉급 보조 정도가 아니라 학술 연구 활성화에 도움이 될 만큼의 연구비가 실질적으로 확충되었다. 두 번째로 이 시기에 연구비 재원

〈표 4-2-10〉 학술 연구비 지원 총액(1976~1989년)

(단위: 건, 천 원)

연도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건수	365	371	369	610	637	405	345
금액	324,210	636,772	899,101	2,055,807	1,911,944	1,311,415	1,290,012
연도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건수	542	620	773	803	1,078	1,093	1,083
금액	1,364,730	1,601,294	2,475,102	4,042,933	6,620,995	10,605,182	10,795,421

비고: 학술 연구비 지원 총액은 용역 연구비를 포함하지 않는다. 용역 연구비는 1988년부터 서울대학교 『통계 연보』에 집계, 수록되었다.

출전: 『서울대학교 40년사』, 554쪽과 『통계연보』, 각년판에서 작성. 단, 각각의 자료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통계연보』의 자료를 수록함.

을 다각화했다. 1970년대 초까지 본교 학술 연구비 재원은 주로 문교부였으나, 종합화 이후 과학기술처와 과학기술처 산하의 한국과학재단 연구비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연구비 재원이 다양해졌다. 이때부터 문교부와 과학기술처의 이원적 대학 연구 지원 체제가 성립했다. 세 번째 특징은 문교부의 기초 과학 지원, 과학기술처의 기초 연구 지원이 다른 연구비에 비해 규모가 월등히 커져서 과학 기술 분야와 인문학 및 사회 과학 분야의 연구비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는 점이다.

먼저 종합화 이후 학술 연구비 지원 상황을 살펴보자. 〈표 4-2-10〉은 1980년대 말까지 본교가 지급받은 총 학술 연구비 규모를 나타낸 것이다. 종합화 직후 학술 연구비 규모는 1976년 3억 원에서 1977년 6억 원, 1978년 9억 원, 1979년 20억 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1980년에 총 학술 연구비 규모가 소폭 감소하지만, 1980년대 초까지 대략 13억 원 정도를 유지하다가 1984년부터 다시 급격하게 증가하여 1980년대 말 100억 원 정도로 증가했다. 연구 과제 수는 1976년 365건이었으나 1989년 1,083건으로 약 3배 증가했고, 연구비 총액은 3억에서 100억대로 30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연구 과제당 연구비는 1976년 약 100만 원에서 1989년 약 1000만 원으로 10배 가량 증가했다.

〈표 4-2-10〉의 자료는 공식적으로 집계한 학술 연구비만 반영한 것이어서 교수 개인 혹은 연구 집단이 비공식적인 통로로 수령한 연구비를 포함하지 않는다. 비공식적 연구비를 포함한다면 본교가 받은 총 연구비는 이 표에 제시한 금액보다 훨씬 크다.

## (2) 문교부 연구비

문교부는 학술 연구 조성비 명목으로 본교에 상당한 금액의 연구비를 지원했다. 이

〈표 4-2-11〉 문교부 학술연구조성비 지원 상황(1976~1989년)

(단위: 건, 천 원)

연도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건수	145	144	163	339	296	280	252
금액	91,000	458,910	363,007	1,386,199	975,000	899,161	868,340
연도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건수	229	254	263	347	156	227	233
금액	789,300	858,600	1,088,165	1,598,865	1,693,165	2,032,056	2,329,314

출전: 『서울대학교 40년사』, 555쪽과 『통계연보』, 각년판에서 작성.

연구비는 학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전임 강사 이상에게 지급하였다. 신청자가 연구위원회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문교부는 학술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비를 지급하는데 소정 기간 내에 연구 중간 보고서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 규정이 있었다. 또 연구비를 지급받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연구 과제, 연구 담당자, 연구 기간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극히 부득이한 경우는 문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변경이 가능했다. 연구 기간 내에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5년 간 연구비 지급을 중단하고 연구 목적 사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변상 책임을 지게 하는 등, 연구비 관리가 상당히 엄격한 편이었다.

〈표 4-2-11〉은 문교부가 본교에 지급한 학술 연구 조성비 총액을 정리한 것이다. 이 표를 〈표 4-2-10〉의 총 학술 연구비와 비교하면, 1985년까지 문교부에서 지급한 연구비가 본교 전체 연구비의 약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986년 이후에는 과학기술처, 한국과학재단, 상공부의 연구비 지원이 급증함에 따라 총 연구비에서 문교부 지원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었다. 1976년부터 1989년까지 14년 동안 문교부에서 지원한 연구 과제 수는 100~300건으로 큰 변화가 없으나, 연구비는 9천만 원에서 23억 원으로 20배 넘게 증가했다.

문교부 학술 연구 조성 사업 중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한 항목은 ‘정책 과제 연구비’, ‘기초 과학 분야 육성비’, ‘대학원 중점 육성 연구비’였다. 문교부는 정책 과제 사업 초기에 이를 일반 정책 과제, 특별 정책 과제, 교육 정책과제 등 크게 셋으로 구분했는데 일반 정책 과제 연구비 지급은 1980년 이후 중단했다. 〈표 4-2-12〉에서 보면 1980년 이전 정책 과제 연구비는 본교에 지급한 문교부 전체 연구비의 20%를 상회할 정도로 비중이 컸으나, 1981년 이후 5~10% 정도로 급격히 감소했다. 이는 당시의 정치 정세 변화 때문이다. 유신 말기 정부가 고등 교육 개혁 정책을 내세우면서 정책 과제 수요가

〈표 4-2-12〉 문교부 정책과제연구비 지원 상황(1977~1989년)

(단위: 건, 천 원)

연도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건수	78	73	76	57	14	9	6
금액	251,410	279,300	344,400	264,000	85,191	53,840	25,400
연도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89
건수	14	4	5	6	9	12	
금액	95,500	34,745	31,800	59,065	178,180	299,240	

출전: 『서울대학교 40년사』, 556쪽과 『통계연보』, 각년판에서 작성.

〈표 4-2-13〉 문교부 기초과학(학문)분야 육성연구비 지원 상황(1977~1990년)

(단위: 건, 천 원)

연도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건수	52	78	30	79	69	46	47
금액	50,000	78,400	390,000	400,000	408,970	270,000	280,000
연도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건수	34	33	35	34	49	47	35
금액	282,500	266,860	381,815	451,300	671,276	718,400	732,400

출전: 『서울대학교 40년사』, 556쪽과 『통계연보』, 각년판에서 작성.

증가했으나, 1979년 10·26 사태 이후 유신 체제가 붕괴하고 1980년 7·30 교육개혁 조치를 확정하면서 정책 과제 수요가 급감했다.

기초 과학 분야 육성비는 본래 명칭이 ‘기초 학문 분야 육성비’ 였으나 1982년부터 기초 과학 분야 육성비로 바꾸었다. 이 연구비는 1978년까지 정책 과제 연구비에 비해 지급 건수나 금액이 크게 적었으나 1979년부터 금액이 정책 과제 연구비를 능가하기 시작했다. 기초 과학 분야 육성비는 1981년 문교부가 본교에 지급한 연구비 총액의 40% 정도를 차지할 만큼 증가했는데 전액을 자연 과학 분야에 지원했다.

1970년대 문교부는 대학 특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본교를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 지정했고, 본교 각 캠퍼스 이전을 완료한 1970년대 말부터 대학원 중점 육성 연구비를 지급했다. 이 연구비는 본교에 집중적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본교는 타 대학보다 상대적으로 큰 혜택을 입었다. 〈표 4-2-14〉에서 나타나듯 1979년부터 1986년까지 대학원 중점 육성 연구비로 지원한 금액은 본교에 지급한 문교부 전체 연구비의 40% 내외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컸다. 이 연구비는 1986년에 지급을 마감했다.

〈표 4-2-14〉 문교부 대학원 증점육성연구비 지원 상황(1979~1986년)

(단위: 건, 천 원)

연도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건수	236	107	196	153	145	176	178	156
금액	650,000	300,000	400,000	360,000	380,000	380,000	380,000	380,000

출전: 『서울대학교 40년사』, 557쪽과 『통계연보』, 각년판에서 작성.

〈표 4-2-15〉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비 지원 상황(1983~1989년)

(단위: 건, 천 원)

연도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건수	18	36	39	52	297	300	317
금액	59,520	103,760	97,065	95,245	896,180	918,920	829,189

출전: 『서울대학교 40년사』, 561쪽과 『통계연보』, 각년판에서 작성.

### (3)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비

1980년대 국내 산업 발전에 따라 우수한 연구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커졌다. 이에 정부는 학술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 조정하기 위해 한국학술진흥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학술 활동 지원 방안 수립과 집행, 각종 연구비와 보조금 지급, 학술 연구 단체에 대한 운영비 보조, 국내외 학술 교류 지원, 연구에 필요한 자료 조사와 수집, 학술 단체나 연구자에 대한 시설과 편의 제공, 학술정보센터 설치와 운영 같은 일을 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은 정부 출연금을 바탕으로 기금을 설치하여 연구 기관과 개인에게 연구비를 지급했는데 본교가 받은 연구비는 〈표 4-2-15〉와 같다. 이 표에 따르면 한국학술진흥재단은 1983년부터 본교에 연구비를 지급했으며, 1986년까지 매년 대략 1억 원 규모의 연구비를 지원했다.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비는 초기에 규모가 크지 않고 본교 전체 연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작았다. 그러나 1987년 이후 연간 연구비 지급액이 9억 원 정도로 증가함으로써 본교 총 연구비의 10% 내외를 차지할 만큼 지원 액수가 커졌다.

### (4) 한국과학재단 연구비

한국과학재단은 과학 기술 연구 능력 배양과 고급 과학 기술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1977년 설립하였고, 주로 과학 기술 분야에 연구비를 집중 지원했다. 이 재단은 자체의 기금과 세계은행(IBRD) 차관 자금으로 기금을 마련했다.

한국과학재단은 1978년 최초의 연구 사업인 일반 기초 연구 사업을 했으며 그 세부



사업으로 일반 연구, 신진 연구, 국제 공동 연구를 지원했다. 일반 연구는 대학·대학원과 그에 준하는 연구 기관에서 일하는 조교수 이상인 사람이 임의로 선택한 연구 과제에 대해 연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신진 연구는 박사학위 취득 직후 대학·대학원과 이에 준하는 연구 기관에서 교육 연구 등에 종사하는 연구자에게 연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었다. 국제 공동 연구는 한국과학재단과 협력 관계인 미국과학재단(NSF), 독일연구협회(DFG) 등을 창구로 하여 국내 학자와 외국 학자의 공동 연구를 지원하며 대상 기관을 대학, 정부 출연 연구 기관, 국공립 연구 기관 등으로 제한했다.

1982년 정부가 기술 우위 정책의 일환으로 특정 연구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초 과학 부문 세부 사업으로 '목적기초사업신설계획'을 마련하고, 1983년 목적 기초 사업을 한국과학재단에서 추진하기로 결정하면서 기존의 일반 기초 연구 사업을 일반 목적 기초 연구 사업으로 확대 변경했다. <표 4-2-16>에서 1985년부터 연구비가 급격하게 증가한 이유는 바로 일반 목적 기초 사업 실시로 연구 지원금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다. 일반 기초 연구 사업 초창기에는 독립적인 소규모 연구를 주로 지원했으나, 일반 목적 기초 연구 사업으로 확대하면서 점차 소형 과제와 더불어 중형 과제를 지원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이에 한국과학재단은 사업을 세분화할 필요가 생겼고, 1986년 특정 목적 기초 연구를 신설하여 3~6명 정도가 공동으로 연구하는 과제를 독립 지원했다. 이

<표 4-2-16> 한국과학재단 연구비 지원 상황(1978~1989년)

(단위: 건, 천 원)

연도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건수	30	34	51	13	10	213
금액	129,919	108,839	138,081	26,422	33,982	401,920
연도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건수	284	425	337	475	334	347
금액	465,605	985,075	1,664,198	2,489,315	2,536,950	2,886,207

출전: 『서울대학교 40년사』, 562쪽과 『통계연보』, 각년판에서 작성.

<표 4-2-17> 본교 학술 연구비 구성(1978~1989년)

(단위: 천 원, %)

연도	학술 연구비 총액(구성비)	문교부(구성비)	한국과학재단(구성비)
1978	899,101(100)	363,007(40.4)	129,919(14.4)
1985	2,475,102(100)	1,088,165(44.0)	985,075(39.8)
1989	10,795,421(100)	2,329,314(21.6)	2,886,207(26.7)

출전: 『통계연보』, 각년판 참조.

때부터 1989년까지 한국과학재단은 연구 사업을 일반 목적 기초 연구와 특정 목적 기초 연구로 이원화했다. <표 4-2-16>으로 알 수 있듯이 특정 목적 기초 연구 사업 실시로 1986년 이후 한국과학재단 연구비 지원액이 급증했다. 다만 세부 사업에 따른 연구비 지원 내역은 본교 공식 자료에 나타나지 않아 여기서 설명할 수 없다.

한국과학재단이 본교에 지급한 연구비는 상당했다. 1970년대 말 30여 건에 1억 원 정도로 지급하던 연구비를 1980년대 말 300여 건에 25억 원 이상으로 증액했다. 10여 년 동안 연구 과제 수가 10배, 연구비가 25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또한 1980년대 초까지 한국과학재단의 연구비 지원 규모는 문교부보다 훨씬 작았으나, 1980년대 중반에는 비슷해졌고, 1980년대 후반에는 더 커졌다(<표 4-2-17>).

#### (5) 서울대학교 학술연구재단 연구비

서울대학교 학술연구재단은 연구비, 출판 보조비, 학술 활동 보조비 등으로 구분한 목적 사업비를 지출해 학술 연구를 지원했다. 상세 내역은 <표 4-2-18>과 같다.

학술연구재단은 1979년까지 일반적인 연구 활동에 연구비를 지원했으나 1980년 이후 주로 학교 정책이나 운영과 관련한 특정 과제에 연구비를 지원했다. 특히 1980년과 1981년 대학 행정, 그중에서도 대학 입시 제도와 관련한 주제에 집중 지원했는데, 이는 제5공화국이 출범하면서 입시 제도가 크게 변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본교 일각에서 학술연구재단 연구비는 일반적인 학술 연구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출판 보조비는 교수들이 연구 도서를 출판할 때 경비를 일부 보조해 주는 것으로, 1984년부터 일률적으로 본문 용지비와 조판비를 서울대학교 출판부를 통해 지급했다. 학술 활동 보조비는 교수들이 국제 학술 대회에 참가하거나 외국 학자를 초청할 때, 학술 대회를 개최할 때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거나, 국제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할 때 필요한 게재료 등을 지급하는 데 사용되었다. 상세 내역은 <표 4-2-19>와 같다.

<표 4-2-18> 학술연구재단 목적사업비 지출 상황(1978~1985년)

(단위: 천 원)

연도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연구비	9,000	10,100	15,951	5,000	21,336	0	25,000	25,000
출판 보조비	8,259	12,700	12,285	13,387	0	19,589	24,598	21,883
학술 활동 보조비	19,088	22,883	16,598	27,566	25,716	39,715	20,628	22,751
계	36,347	45,683	44,834	45,953	47,052	59,304	70,226	69,634

출전: 『서울대학교 40년사』, 558쪽.

〈표 4-2-19〉 학술연구재단 학술활동보조비 지급 건수(1978~1985년)

(단위: 건)

연도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국제 학술 대회 참가 보조	17	22	21	40	19	23	47	13
외국인 초청 학술 대회 보조	15	12	5	18	47	41	14	56
논문 게재	2	7	6	8	2	0	1	0
총수	34	41	32	66	69	64	62	69

출전: 『서울대학교 40년사』, 560쪽.

〈표 4-2-20〉 과학기술처와 상공부 연구비 지원(1985~1989년)

(단위: 천 원)

연도	1985	1986	1987	1988	1989
과학기술처	221,196	596,105	1,019,083	1,374,648	1,581,731
상공부	-	-	126,085	3,156,053	2,346,053

출전: 『통계연보』, 각년판에서 작성.

## (6) 기타 연구비

앞에서 문교부와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과학재단, 그리고 서울대학교 학술연구재단의 연구비를 살펴보았다. 이 외에도 과학기술처와 상공부 등 여타 정부 기관이 연구비를 지원했으며, 산학협동재단, 아산사회복지재단, 성곡문화재단 등 민간 기관도 연구비를 지원했다.

우선 정부 부처 중 과학기술처와 상공부가 1980년대 후반 본교에 지급한 연구비 규모가 매우 컸다. 앞의 〈표 4-2-17〉에서 본교 학술 연구비 총액 중 문교부와 한국과학재단의 연구비 합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1985년 83.8%에서 1989년 48.3%로 감소한 것은 과학기술처와 상공부의 연구비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1988년과 1989년 과학기술처와 상공부 연구비 지원액은 해당 연도 본교 학술 연구비 총액(각각 106억 원, 108억 원)의 40% 내외를 차지할 정도였다(〈표 4-2-20〉 참조). 그러나 이 연구비의 용도와 사용에 관한 본교의 공식 자료를 찾아볼 수 없었다.

한국무역협회와 그 산하 기업들이 설립한 산학협동재단은 본교에 상당한 연구비를 지급했다. 이 재단은 기업과 학문 사이의 상호 협력을 통한 국가 발전을 목표로 학술 연구비와 장학금을 지급하고, 학술 대회 개최와 국제 교류 활동을 지원했다. 또한 재단의 취지나 목적에 부합하면 인문 과학 분야에도 연구비를 지원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인문학 대 자연 과학 지원 비율이 3 : 7 정도였다. 재단의 지원 방식은 ‘지정 과제 제도’로, 학계와 산업계에서 과제를 추천받아 대학에 제시하고 그에 응하는 연구자에게 우선적

〈표 4-2-21〉 산학협동재단 연구비 지원 상황(1976~1989년)

(단위: 건, 천 원)

연도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건수	55	27	23	28	25	28	15
금액	59,190	48,580	41,400	58,320	70,100	93,550	47,520
연도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건수	22	16	18	22	17	14	17
금액	49,490	32,100	35,900	43,350	41,175	44,175	68,500

출전: 『서울대학교 40년사』, 564쪽과 『통계연보』, 각년판에서 작성.

으로 연구비를 지원했다. 산학협동재단이 1976년부터 1989년까지 본교에 지급한 연구비는 〈표 4-2-21〉과 같다.

1976년 이후 1989년까지 산학협동재단의 연구비 지원 과제 수는 감소했고, 지원액은 거의 비슷한 수준(3천만~1억 원 사이)을 유지했다. 1980년대 중반까지 산학협동재단의 연구비는 본교 학술 연구비 총액의 5% 정도였으나, 1980년대 중반 이후 1% 이하로 줄어들었다.

1977년 현대그룹 고 정주영 회장이 설립한 아산사회복지재단은 주로 한국학, 사회 발전, 컴퓨터 분야를 지원했다. 이 재단은 1977년도 33과제에 7,800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했으나, 이후 지원액이 계속 줄어 1980년대에는 매년 최하 1천만 원에서 최고 6천만 원 정도의 연구비를 지원했다.

성곡문화재단은 1969년 이후 주로 인문학과 사회 과학 분야에 연구비를 지원했다. 이 재단은 1976년부터 1982년까지(1981년에는 지원이 없었다) 연평균 3건 안팎의 연구과제에 연구비를 지원했는데, 건당 평균 액수는 적게는 500만 원에서 많게는 1,200만 원에 이르렀다. 태평양재단은 주로 자연 과학 분야에 연구비를 지원했는데 1977년부터 1982년까지 총 10건에 1,300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했다. 이 밖에 금옥학술문화재단이 1979년과 1980년 모두 3건에 300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했다.

한편 국내 기관뿐 아니라 외국 기관도 연구비를 지원했는데, 대부분 단기적이었다. 그러나 지원 과제당 연구비는 국내 기관이 지급한 연구비에 비해 훨씬 많아서 연구 담당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일례로 1980년의 경우 해외 기관이 7건의 과제에 지급한 연구비 총액은 1억 7,811만 2천 원으로 이는 1건당 평균 2,500만 원이나 되는 큰 금액이었다.

### 3) 대규모 연구비 지원(1980년대 말~2006년)

#### (1) 연구비 총액 규모와 학문 분야별 연구비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 본교 학문 연구 제도와 연구비 지원 방식에서 굵직한 변화가 있었다. 우선 1987년 서울대학교 발전장기계획에서 연구중심의 대학원 중심 대학을 표방하면서 대학의 3대 기능(교육, 연구, 사회봉사) 중 연구가 특히 중요해졌고, 또 연구처가 출범하면서 대학 연구 관리를 체계화했다. 두 번째, 본교는 한국과학재단의 우수 연구 센터 육성 사업이나 과학기술부의 특정 연구 개발 사업 등의 대형 과제, 대규모 연구비 지원을 집중적으로 받아 단기간에 과학 기술 연구 개발 역량을 성장시킬 수 있었다.

1990년대 전반까지 정부는 대부분의 연구비 지원을 과학 기술 분야에 집중하고 인문학 등 기초 학문 분야에 대한 지원을 소홀히 했다. 본교가 1990년 발전기금 중 연구비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기초 학문 분야와 외부 지원이 적은 분야에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교육부가 1993년 인문사회과학 중점영역 연구사업을 신설하는 등 기초 학문에 대한 지원과 배려가 어느 정도 있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기초 학문에 대한 연구비 지원은 크게 늘지 않았고, 응용 학문과 기초 학문의 연구비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그러자 1990년대 중반 학내 교수 사회는 인문학 위기론, 기초 학문 고사론 등을 거론하며 순수 학문 연구자의 위기의식을 강력하게 표출했다. 이를 감안하여 정부는 1990년대 후반부터 한국학술진흥재단을 중심으로 인문학, 사회 과학 같은 기초 학문에 대한 연구비 지원을 확충하고, 학문 분야 간 지원 격차를 줄이고자 노력했다. <표 4-2-22>에 한국학술진흥재단이 1986년부터 2001년까지 전국 대학에 지원한 연구비를 인문학 및 사회 과학 분야와 이공학 분야로 나누어 정리했다. 1986년부터 인문학 및 사회 과학 분야와 이공학 분야의 연구비 격차가 점차 커지기 시작하여 1994년 약 1 : 2에 달했다. 그러나 1996년

<표 4-2-22> 한국학술진흥재단 학문 분야별 연구비 지원 상황(1986~2001년)

(단위: 백만 원)

연도	1986	1988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1
인문학·사회 과학 분야	865	1,199	2,331	2,796	4,204	8,261	12,890	14,259	18,714
이학·공학 분야	1,188	2,118	4,206	3,565	8,167	12,965	13,563	14,019	15,048

비고: 연도별 연구비 총액은 자유 공모, 지방대 육성, 전문대, 신진 교수, 선도 연구자, 협동 연구 과제, 대학 부설 연구소 등의 분야 연구비 합계이다.

출전: 한국학술진흥재단 홈페이지(<http://www.krf.or.kr>) 통계 자료를 가공했다.

부터 분야 간 연구비 격차가 감소하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인문학 및 사회 과학 분야의 연구비가 이공학 분야보다 비슷하거나 약간 더 커졌다.

한편 본교는 급증한 연구 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세계적 수준의 연구 중심 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1990년대 중반부터 구조 조정과 혁신을 꾀했다. 연구 평가에 관한 국제 지표를 도입하여 업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대학원에 대한 연구 지원을 강화했다. 이와 더불어 교육부가 추진한 두뇌한국21(BK21) 사업이 1999년부터 최근까지 본교 대학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학문 후속 세대 양성에 큰 도움을 주었다.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연구비와 관련한 주요 지표별로 살펴보자. 우선 본교가 1980년대 말부터 최근까지 수혜한 연구비 총액은 <표 4-2-23>과 같다. 1987년까지 본교 『통계 연보』는 교무처(1987년부터 연구처)를 통해 각 교수들에게 지급한 학술 연구비만

<표 4-2-23> 본교 연구비 총액(1988~2005년)

(단위: 천 원)

연도	학술 연구비		용역 연구비(민간 기관)		총계	
	과제 수	금액	과제 수	금액	과제 수	금액
1988	1,093	10,605,182	337	7,885,005	1,430	18,490,187
1989	1,083	10,795,421	446	9,221,496	1,529	20,016,917
1990	1,120	14,577,789	572	9,957,192	1,692	24,534,981
1991	988	16,196,931	949	11,461,728	1,937	27,658,659
1992	1,094	18,557,480	891	17,829,936	1,985	36,387,416
1993	1,071	23,671,303	952	21,135,235	2,023	44,806,538
1994	1,200	29,770,992	1,213	31,785,328	2,413	61,556,320
1995	1,504	42,880,326	1,331	42,756,408	2,835	85,636,734
1996	1,458	53,827,298	1,076	43,448,761	2,534	97,276,060
1997	1,244	60,087,802	1,236	45,733,285	2,480	105,821,087
1998	1,223	61,997,998	1,710	40,033,990	2,933	102,031,988
1999	1,220	89,776,796	1,543	38,672,214	2,763	128,449,010
2000	1,466	126,627,168	1,646	21,900,334	3,112	148,527,502
2001	2,286	152,965,205	876	23,235,861	3,162	176,201,066
2002	2,482	183,574,813	759	20,696,700	3,241	204,271,514
2003	2,326	207,890,879	818	23,324,835	3,587	240,863,616
2004	2,535	232,253,499	810	28,178,911	3,737	270,167,816
2005	2,693	258,852,770	921	32,428,180	3,614	291,280,950

비고: 대학본부는 2003년부터 용역 연구비를 '민간 기관(해외 수주 포함)'으로 변경했다.

출전: 『통계연보』, 각년판에서 작성.

집계했으나, 1988년부터 연구처를 통하지 않은 용역 연구비도 집계하기 시작하여 1988년 이후 학술 연구비와 용역 연구비의 총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1989년 본교는 약 1,500건의 과제에 약 200억 원의 연구비를 받은 데 비해, 2005년 3,600여 건에 약 2,900억 원의 연구비를 받아 16년 사이에 연구 과제 수는 약 2.4배, 연구비는 약 14.5배 증가했다. 또 과제당 연구비는 1980년대 말 1천만 원 정도에서 2000년대 6천만~8천만 원으로 증가했다.

본교 연구비 총액 중 학술 연구비와 용역 연구비가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면,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두 연구비의 비중은 비슷하거나 학술 연구비가 약간 더 많았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 학술 연구비가 용역 연구비에 비해 월등하게 컸다. 학술 연구비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1990년대 한국과학재단의 우수 연구 센터 육성 사업과 2000년대 교육부의 BK21 사업이다.

본교 연구비 중 용역 연구비는 연구처를 거치지 않고 각 단과대학(원)에 직접 지급해 주로 지원 기관의 수익을 위한 연구에 사용되었다. 용역 연구비는 1988년 79억 원에서 1991년 118억 원, 1994년 318억 원을 거쳐 1998년 457억 원으로 늘어나 11년 동안 약 5.8배 증가했다. 특히 1994년에는 용역 연구비가 학술 연구비를 넘어섰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용역 연구비의 지원 과제 수와 지원액은 급격히 감소하여 2005년 현재 921건, 약 300억 원 규모에 그쳤다. 1990년대까지 용역 연구는 해당 기관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단기적 성격의 응용 연구와 개발 연구가 많았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중장기적인 기초 연구 비중이 높아졌다. 이에 본교는 ‘용역 연구비’라는 용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민간 기관’ 지원 연구비로 명칭을 변경했다.

다음으로 본교 학술 연구비의 연도별 추이를 주요 지원 기관별로 살펴보자. <표 4-2-24>를 보면 학술 연구비를 교육인적자원부,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과학재단, 과학기술부, 기타 정부 기관 등 주로 정부 예산에서 지원했다. 평균적으로 전체 학술 연구비 중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95% 안팎이며, 각종 재단은 5% 내외였다. 정부 기관 연구비 가운데 한국과학재단/과학기술부 연구비가 30~40%, 교육인적자원부/한국학술진흥재단 20~30%, 기타 정부 기관 연구비가 20~40%를 차지했다.

1990년부터 2005년까지 학술 연구비 총액이 꾸준히 증가했는데, 그중 주목할 만한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자. 우선 한국과학재단은 1990년부터 우수 연구 센터 사업을 시작하여 대규모 과학 기술 공동 연구비를 지원했으며, 90년대 초 본교 연구비 증가에 크게 기여했다. 1990년 이후 교육부와 한국학술진흥재단이 본교에 지원한 연구비 역시 구

〈표 4-2-24〉 주요 재원별 학술연구비 지원 상황(1990~2005년)

(단위: 백만 원)

연도	교육인적자원부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과학재단 (과학기술부)	기타 정부 기관	각종 재단 (대학 자체)	계
1990	2,980	3,786	6,892	920	14,578
1991	3,254	7,279	4,089	1,575	16,197
1992	3,321	9,481	3,961	1,795	18,557
1993	4,886	9,567	6,817	2,401	23,671
1994	6,840	10,935	8,045	3,950	29,771
1995	10,170	13,654	12,050	7,007	42,880
1996	12,228	17,018	22,555	2,026	53,827
1997	13,286	17,351	27,749	1,701	60,088
1998	12,605	15,738	31,539	2,116	61,998
1999	28,961	20,965	35,544	4,307	89,777
2000	48,026	34,238	35,269	9,094	126,627
2001	45,844	48,050	52,179	6,892	152,965
2002	44,731	75,804	54,730	8,310	183,575
2003	51,321	90,490	66,079	9,648	217,538
2004	56,405	89,128	86,720	9,735	241,988
2005	67,701	82,101	100,891	8,160	258,853

비고: 1. 2000년부터 '한국과학재단' 학술 연구비 항목에 과학기술부의 연구비를 합산하였다.

2. '기타 정부 기관' 은 1999년까지는 교육부, 학술진흥재단, 한국과학재단을 제외한 정부 기관이고, 2000년부터는 교육부, 학술진흥재단, 과학기술부, 한국과학재단을 제외한 정부 기관이다.

3. 2002년까지 '각종 재단' 은 서울대학교 발전기금과 수암장학문화재단 등의 각종 대학 외부 재단을 의미했다. 그러나 2003년부터 기존의 '각종 재단' 항목을 '대학 자체' 로 변경하고, 대학 외부 재단 지원액을 제외했다. 따라서 '대학 자체' 항목에는 대학 내부 연구비 지원액만 기입하였다.

출전: 『통계연보』, 각년판에서 작성.

준한 증가세를 이어 오다가 1999년 BK21 사업을 실시한 뒤 규모가 급증했다. 기타 정부기관 역시 연구비 지원액을 대체로 늘렸고, 2005년에는 1천억 원 정도의 연구비를 본교에 지원했다.

최근 연구처는 연구비 집계 방식을 바꾸어 〈표 4-2-25〉처럼 연구비 재원을 크게 대학 외부와 내부로 나누고, 대학 외부를 공공 부문과 민간, 해외 수주로 세분화했다. 또 공공 부문을 정부 기관과 정부 출연/투자 기관으로 나누고, 민간 부문에 기존의 용역 연구비와 대학 외부의 각종 민간 재단 연구비를 포함하였다. 이는 학술 연구와 용역 연구를 구분할 필요가 없어진 최근의 대학 연구 경향을 반영하며, 이로써 재원에 따른 연구비 규모를 총체적으로 명확하게 알 수 있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본교 연구비의 재



〈표 4-2-25〉 본교 연구비 수주 실적(2001~2005년)

(단위: 천 원)

지원 기관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총계		176,201,066	204,271,514	240,863,616	270,167,816	291,280,950
계		170,509,935	198,779,498	231,215,714	260,432,410	283,121,257
외 부 문	소계	146,073,371	175,264,558	207,890,879	232,253,499	250,693,077
	소계	137,292,849	158,621,245	199,419,721	230,547,503	244,791,704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진흥재단	45,843,964	44,730,815	51,321,327	56,405,283	67,700,786
	과학기술부/ 한국과학재단	48,050,005	75,803,814	90,490,308	89,128,497	82,101,431
	산업자원부	15,416,920	9,962,318	15,337,382	32,341,737	35,946,609
	보건복지부	11,613,511	12,879,873	19,157,236	17,273,376	18,684,808
	건설교통부	1,473,505	562,040	523,680	6,252,925	5,691,424
	정보통신부	210,650	3,274,039	3,669,765	6,277,832	6,580,797
	농림부	4,768,258	3,573,882	3,859,172	9,192,953	13,040,848
	환경부	3,299,131	1,238,285	3,773,368	5,440,294	4,884,361
	기타 중앙 부처	5,416,655	5,384,458	9,489,275	6,504,023	7,566,115
	자치 단체	1,200,249	1,211,721	1,798,207	1,730,582	2,594,526
	출연/투자 기관	8,780,522	16,643,313	8,471,157	1,705,996	5,901,372
	민간 부문 (재단/단체 포함)	22,693,370	23,036,047	22,672,079	27,733,204	31,574,048
	해외 수주	1,743,194	478,893	652,756	445,707	854,132
내 부	계	5,691,130	5,492,016	9,647,902	9,735,406	8,159,693
발전기금	3,581,081	3,945,118	4,880,980	5,455,664	3,366,329	
기타	2,110,049	1,546,898	4,766,922	4,279,742	4,793,364	

출전: 연구처 제공 자료.

원별 구성비를 분석하면, 대학 외부가 97%, 내부가 3% 정도였다. 대학 외부 연구비 97% 중 공공 부문이 86%, 민간 부문이 11%, 해외 수주가 0.2% 내외였다. 대학 내부 연구비 중 서울대학교 발전기금보다 기타가 현저히 증가했는데, 이는 기타의 주요 재원인 간접 연구 경비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1992년부터 2005년까지 단과대학별 연구비 변화를 보면서 학문 분야별 연

구비 지원의 차이를 살펴보자. 우선 공과대학은 단과대학 중에서 가장 많은 연구비를 받았고, 전 시기에 걸쳐 본교 전체 단과대학(원) 연구비 총액의 40% 안팎이 되는 연구비를 받았다. 공과대학 다음으로 자연과학대학, 의과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등 과학 기술 분야의 단과대학이 연구비를 많이 받았다. 본교 전체 단과대학(원)은 1992년 364억 원, 2005년 2,913억 원의 연구비를 받아, 13년 동안 총액이 약 8배 증가했다(〈표 4-2-26〉). 대학별로 살펴보면 같은 기간 동안 인문대학의 연구비 수혜액은 39배, 사회 과학 대학은 4배, 자연과학대학은 8배, 공과대학은 9배, 농업생명과학대학은 10배 증가했다. 대부분의 단과대학 연구비가 최근 13년 동안 4배에서 10배 사이로 증가했으나, 인문대

〈표 4-2-26〉 단과대학(원)별 연구비 총액

(단위: 백만 원)

연도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3	2004	2005
인문대학	401	599	704	1,591	2,697	6,536	8,285	9,307	15,568
사회과학대학	1,144	1,391	2,605	1,640	2,556	4,278	4,894	5,102	4,556
자연과학대학	7,321	11,152	13,479	14,945	28,668	41,650	45,933	51,764	56,810
생활과학대학	130	229	316	365	1,448	664	1,679	1,631	1,517
간호대학	16	36	88	296	147	299	325	192	560
경영대학	562	491	1,223	201	775	2,171	3,569	6,207	7,825
공과대학	12,481	25,932	36,791	43,952	61,042	78,034	93,449	111,763	109,515
농업생명과학대학	2,645	5,127	5,666	10,667	13,574	17,395	19,713	21,521	25,796
미술대학	944	420	4,231	1,879	952	1,153	1,187	1,043	964
법과대학	19	227	106	152	1,021	1,326	2,066	3,223	1,728
사범대학	481	1,114	2,629	1,353	2,483	2,463	2,445	3,355	3,218
수의과대학	215	843	2,982	2,429	2,566	4,733	6,170	6,688	8,967
약학대학	1,299	2,242	3,539	3,938	4,077	8,907	10,380	9,709	10,322
음악대학	4	15	39	60	86	60	40	-	-
의과대학	6,264	5,117	14,524	11,526	17,997	27,058	34,105	31,670	35,469
치과대학	493	451	891	672	1,587	2,797	4,440	4,958	5,655
보건대학원	50	318	1,212	298	796	1,394	150	470	1,519
행정대학원	152	1,239	739	688	932	1,561	183	423	822
환경대학원	550	904	1,891	1,429	1,041	1,447	1,306	515	302
국제대학원	-	-	-	-	-	347	538	627	169

비고: 1. 치과대학은 2005년 치의학대학원으로 바뀌었다.

2. 국제대학원은 2001년 이전에 본부 직할 연구소인 국제지역원이었다.

3. 연구비 총액은 학술 연구비와 용역 연구비를 합한 금액이다.

출전: 『통계연보』, 각년판에서 작성.

〈표 4-2-27〉 단과대학별 교수 1인당 평균연구비(1992~1994년)

(단위: 만 원)

연도 단과대학	1992	1993	1994	평균(비율)
인문대학	271	443	487	400(1)
사회과학대학	1,144	1,565	1,364	1,358(3.4)
자연과학대학	4,848	5,346	6,802	5,665(14)
공과대학	7,091	8,753	13,097	9,647(24)
농업생명과학대학	2,593	3,375	4,883	3,617(9)
의과대학	2,677	1,497	2,150	2,108(5.2)

비고: '비율'은 인문대학의 평균 연구비를 1로 봤을 때 여타 단과대학이 차지하는 비율을 표시한 것이다.

출전: 『서울대학교 50년사』, 828쪽.

학 연구비는 무려 39배나 급증했다. 인문대학 연구비 증가는 1990년대 중반 인문학 위기론이 거론된 이후 인문학을 중심으로 기초 학문에 대한 지원이 증가했음을 반영한다.

단과대학별 교수 1인당 평균 연구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서 연구 지원 상황을 더 자세하게 알아보자. 〈표 4-2-27〉은 6개 단과대학을 표본으로 뽑아 1992년부터 1994년까지 3년 동안 교수 1인당 평균 연구비를 나타냈다. 3년 간 교수 1인당 연평균 연구비를 살펴보면 인문대학 교수는 400만 원, 자연과학대학 교수는 인문대학 교수 1인당 연구비의 14배에 해당하는 5,665만 원, 공과대학 교수는 24배에 해당하는 9,650만 원을 받았다. 물론 각 학문 분야별로 연구에 소요되는 고정 연구비 편차가 크므로 교수 1인당 연구비를 직접 비교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1990년대 초 연구비 격차가 큰 것은 1975년 종합화 이후 과학 기술 분야를 집중 지원한 결과다. 1980년대 말 본교가 연구 중심 대학을 표방하면서 과학 기술 분야에 대한 편중 지원 현상은 더욱 심해졌다. 이러한 이유로 본교 교수 사회는 1990년대 중반 기초 학문에 대한 위기의식, 즉 인문학 위기론을 심각하게 제기했다.

1990년대 초반 인문학 분야와 과학 기술 분야의 교수 1인당 연구비 격차가 매우 컸으나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들어 이러한 격차는 줄어드는 추세다. 〈표 4-2-28〉을 통해 〈표 4-2-27〉처럼 교수 1인당 평균 연구비를 인문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간의 비율로 비교해 보자. 1998년 인문대학을 1이라고 할 때, 자연과학대학은 8.5, 공과대학은 19이고, 2004년의 경우 인문대학을 1로 볼 때, 자연과학대학은 4, 공과대학은 6이다. 2005년은 인문대학 1, 자연과학대학 3, 공과대학 3.8이다. 이와 같이 1990년대 초반 크게 벌어졌던 단과대학별 연구비 격차는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들어 현저하

〈표 4-2-28〉 단과대학(원)별 교수 1인당 평균연구비(1998~2004년)

(단위: 천 원)

연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인문대학	10,199	13,331	16,859	15,278	42,998	50,214	53,796	93,224
사회과학대학	16,397	23,711	25,820	18,833	39,608	43,694	43,240	39,278
자연과학대학	86,887	114,946	159,267	156,933	210,353	212,651	220,274	277,122
간호대학	16,456	17,679	8,139	25,537	15,737	17,087	9,610	31,113
경영대학	6,946	34,215	25,847	11,643	60,310	96,467	124,145	181,978
공과대학	195,344	231,408	244,167	252,913	260,984	295,726	324,892	357,891
농업생명과학대학	106,672	129,543	139,933	171,510	161,066	174,452	179,343	234,511
미술대학	62,620	19,255	31,736	9,749	36,043	38,288	30,666	27,536
법과대학	4,456	13,877	30,039	30,686	38,993	49,190	76,748	42,139
사범대학	13,008	17,204	27,585	25,890	24,385	23,975	30,776	30,363
생활과학대학	15,853	31,731	62,978	45,177	27,663	64,564	56,232	54,167
수의과대학	83,761	89,343	82,775	177,514	135,222	166,763	171,494	235,970
약학대학	123,071	118,518	131,541	191,468	228,389	259,503	215,755	234,581
음악대학	1,500	3,957	2,138	3,024	1,538	1,000	-	-
의과대학	48,427	69,092	76,261	57,370	71,581	89,513	60,440	78,995
치과대학	10,180	16,462	24,043	44,650	36,798	48,794	46,335	62,148
보건대학원	14,197	37,015	39,811	60,725	73,366	7,144	20,418	72,319
행정대학원	38,206	43,497	49,027	51,842	78,028	8,693	16,253	32,862
환경대학원	89,305	62,416	65,045	11,250	96,444	76,808	24,534	14,377
국제대학원	-	-	-	9,241	31,573	44,818	36,860	9,938

출전: 『통계연보』, 각년판에서 작성.

게 줄었다. 인문학과 과학 기술 분야 간 연구비 격차가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과학 기술 분야 중 기초 학문 성격이 강한 자연과학대학과 응용 학문 성격이 강한 공과대학 사이의 연구비 격차가 줄어들어 일 또한 주목할 만하다. 자연과학대학과 공과대학의 교수 1인당 평균 연구비는 1990년대 후반까지 약 1 : 2의 비율이었으나, 2000년대에 들어 1 : 1.2~1.5 정도로 격차가 줄었다.

본교 역시 1990년대 중반 기초 학문 위기론이 높아지자 1995년부터 발전기금 모금액 중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구 학술 기금을 인문학 및 사회 과학 계열에 집중 지원 하여 학문 분야 간 불균형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본교는 1980년대 후반부터 순수 학 문 연구와 지식 창조라는 대학의 본질적 기능을 외면하고 실용주의적 시각에 빠져 있던 대학관을 바로잡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 구체적으로 1990년대 후반 한국학과 통

일학 분야에 연구비를 증액 배정하여, 기술 학교, 기술 지식 공장의 성격에서 벗어나 기초 학문 대학의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노력했다. 이러한 대내외적 노력의 결과, 본교는 학문 분야 간 연구비 격차를 현저하게 줄이고 기초 학문 중심의 연구 중심 대학 정체성을 회복하였다.

## (2) 교육인적자원부/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비

### ① 교육부 연구비(1987~1998년)

교육부 연구비는 종합화 이후 1980년대 후반까지 서울대학교 전체 학술 연구비 가운데 약 절반 정도를 차지했으나, 1980년대 말부터 비중이 줄어들어 2000년대는 교육부와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비를 합했을 때 본교 전체 학술 연구비의 20~30% 정도였다. 또한 1975~1980년대 후반까지 교육부 연구 사업 중 정책 과제, 기초 과학 분야 육성, 대학원 중점 육성 연구 등이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1986년 대학원 중점 육성 연구가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고, 1980년대 중반부터 정책 과제의 비중이 크게 줄었다. 반면 1980년대 말부터 기초 과학 연구비를 비롯한 이공계 학문 분야 대상의 연구비가 교육부 교

〈표 4-2-29〉 교육부 세부 과제별 연구비 지원

(단위: 백만 원)

연도	기초 과학 연구	유전 공학 연구	반도체 공동 연구	신소재 개발 연구	지역 개발 연구	정책 과제	규장각 연구	기초 의학 연구	인문·사회 과학 중점 영역 연구	총액 (21과제)
1987	451	200	380	450	-	59	-	-	-	1,693
1988	670	256	200	356	11	178	-	-	-	2,032
1989	718	270	500	129	47	299	100	-	-	2,329
1990	732	248	500	169	27	58	100	96	-	2,190
1991	835	251	634	139	16	55	100	165	-	2,502
1992	913	275	700	170	37	176	100	161	-	2,672
1993	1,051	351	467	206	16	284	200	300	203	3,412
1994	1,724	465	445	303	20	336	280	469	261	4,773
1995	3,199	694	626	570	14	233	300	933	251	8,108
1996	3,500	760	741	673	34	215	300	1,078	332	9,536
1997	3,478	744	743	694	-	295	370	827	-	8,552
1998	2,944	803	1,249	727	-	694	250	579	-	9,177

출전: 『통계연보』, 각년판에서 작성.

원 연구비 지원의 주류를 이루었다. <표 4-2-29>에서 교육부 연구비 가운데 비중이 높은 9가지 사업에 대한 연구비와 21가지 과제의 연구비 총액을 1987년부터 1998년까지 연도별로 정리했다. 그리고 1999년부터 교육부는 학술 연구비 지원 사업을 모두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이관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③ 교육인적자원부/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비(1999~2005년)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기초 과학 연구비는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지질학 등 기초 과학 분야를 지원하는 연구비로 본교 교육부 연구비 중 30% 정도이며 20여 종류의 교육부 연구비 가운데 비중이 가장 크다. 신소재 개발 연구비는 신금속, 뉴세라믹, 고분자 등의 분야를, 유전 공학연구비는 분자 생물학, 분자 유전학, 분자 세포학, 생체학, 세포 유전학, 미생물학, 바이러스학, 발생 생물학, 효소학 등의 분야를 지원했다. 반도체 관련 분야를 지원하는 반도체 공동 연구비는 다소의 증감이 있지만 대체로 교육부 연구비의 10~20% 정도였다. 기초 의학 연구비는 1990년부터 병원체와 숙주 반응, 신경계와 내분비계를 포함한 생체 내 신호 전달, 독물과 약물의 작용 기전과 해독에 관한 연구를 지원했다. 과학, 공학, 의학 등 과학 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비 지원액이 전체 교육부 연구비의 8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다.

교육부는 인문학 및 사회 과학 분야에 대한 지원을 크게 지역 연구와 한국학 분야에 집중했다. 교육부는 지방 자치제 준비와 국제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1988년부터 지역 연구 분야에 연구비를 지원했다. 지역 개발 연구비는 지역 사회의 개발을 촉진하는 연구를 활성화하고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여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데 적은 액수나마 꾸준히 지급되었다. 이 외에도 교육부는 다양한 항목으로 지역 연구 과제를 지원했다.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까지 공산주의권 연구, 개발도상국 연구, 일본 연구, EC 지역 연구, 사회주의권 협력 연구, 외국 지역 연구 등의 과제에 연구비를 지원했다.

교육부는 1989년부터 규장각 지원 연구비를 신설하여 1992년까지 해마다 1억 원의 연구비를 지급했고, 1993년부터 1998년까지 연 평균 3억 원 정도의 연구비를 지원하여 한국학 연구 진흥에 큰 도움을 주었다. 또한 1990년대 초 이공계에 비해 인문학과 사회 과학 계열의 연구비 지원이 적어 학문 분야 간 불균형이 심각해지자 교육부는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1993년부터 인문·사회 과학 중점 영역 연구비를 신설했다. 이 연구비는 인문학 및 사회 과학 분야의 우수 대학 부설 연구소의 공동 연구를 지원했으며 1997년 이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인문·사회 중점 연구 사업으로 이관했다.

## ②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비(1987~1998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이 본교에 지원한 연구비는 1980년대 말부터 1992년까지 완만하게 감소하다가 1993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 재단에서 지원한 주요 연구 과제로 자유 공모 연구, 대학 부설 연구소 연구, 국제 협력 연구, 신진 연구 인력 연구 등이 있는데, 그 연도별 추이는 <표 4-2-30>과 같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은 자유 공모 연구 사업을 통해 모든 학문 분야에서 단독 연구와 공동 연구를 신청받아 우수한 연구 과제를 공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했다. 본교에 지원한 자유공모 연구비는 1987~1990년까지 한국학술진흥재단 전체 연구비의 90% 안팎을 차지할 만큼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으나, 1991년 이후 구성비는 감소 추세였다. 대학 부설 연구소 연구 사업은 연구 업적과 학술 활동 실적이 우수한 중점 육성 연구소에 1~3년 동안 연간 1억 5천만 원 이내의 연구비를 지급했다. 국제 협력 연구 사업은 국제 학술 정보의 교류와 선진 과학 기술의 도입을 위해 1993년부터 시작했다. 재단은 1994년 신진 연구 인력 연구 사업을 신설해 차세대 연구자들에게 연구 활력을 불어넣었으나 지속하지 못하고 다음 해인 1995년에 사업을 중단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은 학술 연구비 지원 사업 외에도 학문 후속 세대 지원, 학회의 학술 활동 지원, 국제 학술 교류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본교 연구 기관과 연구 인력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lt;표 4-2-30&gt; 한국학술진흥재단 세부 과제별 연구비 지원(1987~1998년)

(단위: 백만 원)

연도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자유 공모 연구	571	818	775	760	475	474	1,045	976	1,205	835	1,564	1,906
대학부설 연구소 연구	-	81	102	84	255	118	374	233	241	682	1,064	-
국제 협력 연구	-	-	-	-	-	-	39	163	154	305	245	580
신진 연구 인력 연구	-	-	-	-	-	-	-	649	390	-	-	-
학제 간 연구	-	-	-	-	-	-	-	-	-	242	250	145
외국 석학 공동 연구	-	-	-	-	-	-	-	-	-	537	738	130
인문 사회 중점 연구	-	-	-	-	-	-	-	-	-	-	446	437
총액(12과제)	896	919	829	790	752	650	1,474	2,068	2,062	2,692	4,734	3,428

출전: 『통계연보』, 각년판에서 작성. 1989년과 1990년 수치가 오류가 있다. 자유 공모 연구비와 대학 부설 연구소 연구비 합계가 12과제 총액보다 크나, 이를 수정 보완할 근거가 없다.

### ③ 교육인적자원부/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비(1999~200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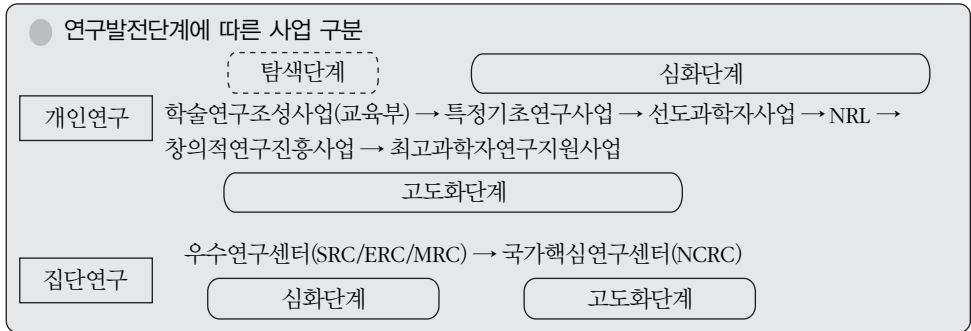
1998년까지 교육부(2001년 교육인적자원부로 명칭 변경)와 한국학술진흥재단은 연구 지원 사업을 별도로 진행했으나, 1999년 학술 연구 지원 사업을 재편하면서 30여 가지가 넘는 양 기관의 사업을 대거 통합하여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일괄 집행하는 체제로 개혁했다. 자유 공모 과제 사업 중 단독 과제를 선도 연구자 지원 사업으로 변경했으며 자유 공모 중 공동 과제와 국제 협력 공동 연구, 학제 간 공동 연구, 과학 기술 기초 중점 연구(비연구소), 외국 석학 공동 연구, 해외 지역 연구 등의 공동 연구 사업을 협동 연구 지원 사업으로 통합했다. 또 대학 부설 연구소 지원 사업과 인문·사회 중점 영역 지원 사업으로 분산하여 시행하던 대학 연구소 지원 사업을 대학 부설 중점 연구소 지원 사업으로 통합했다.

교육부는 과학 기술 분야 사업으로 1979년 기초과학연구소 지원을 시작해 1998년까지 기초과학연구소, 반도체, 신소재, 기계 공학, 유전 공학, 생물 화학 공학, 기초 의학, 해양 수산, 농업 과학, 학제 간 연구 등 10개 세부 사업을 시행했다. 교육부는 이 사업 중 학제 간 연구를 1996년에, 나머지 사업을 1998년에 한국학술진흥재단으로 이관했고, 한국학술진흥재단은 2000년부터 기존의 과학 기술 분야 사업을 모두 기초 과학 연구 지원 사업으로 통합했다. 또 한국학술진흥재단은 2000년에 인문학 육성 지원 과제를 신설해 인문학 분야 기초 연구를 지원했는데, 2002년부터 이 사업과 기초 과학 연구 지원 사업을 통합해 기초 학문 육성 지원 사업으로 확대했다. 2003년 현재 한국학술진흥재단은 단독 연구 지원 사업(우수 연구자, 학문 후속 세대), 공동 연구 지원 사업(협동 연구, 중점 연구소), 우수 학술 단체 지원 사업, 기초 학문 육성 지원 사업(기초 과학, 인문 사회, 보호 학문), BK21 지원 사업 등으로 각종 세부 사업들을 대분류하여 수행했다. 이와 같이 1990년대 말부터 교육부와 한국학술진흥재단 사업은 여러 차례의 통합과 조정을 거치며 변화했다.

또 정부는 2004년 부처 간 업무 조정으로 과학기술부는 “심화·고도화 단계의 개인·소규모 연구와 집단 연구 우선 지원”, 교육인적자원부는 “탐색 단계의 개인·소규모 연구 등을 우선 지원”한다는 원칙을 정함으로써 과학기술부의 기초 과학 지원 사업 일부를 학술진흥재단으로 이관했다. 예를 들어 기존에 과학기술부 개인/소규모 연구 지원 사업이던 젊은 과학자 연구 활동 지원(신진 교수), 지역 대학 우수 과학자 지원, 여성 과학자 지원 사업 등을 한국학술진흥재단 사업으로 바꾸었다. 이로써 한국학술진흥재단은 2006년 현재 우수 연구 지원(신진 교수, 기초 연구 과제, 우수 학자, 학문 후속 세



그림 4-2-2 교육부와 과학기술부의 사업 구분 모형. 출전: 한국과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ef.re.kr>).



〈표 4-2-31〉 BK21 사업비 지원 현황(1999~2004년)

(단위: 백만 원)

구분	1차(1999년)	2차(2000년)	3차(2001년)	4차(2002년)	5차(2003년)	6차(2004년)	계
과학 기술	21,081	34,978	35,677	29,067	31,428	31,428	183,659
인문 사회	759	2,387	2,377	1,908	886	886	9,203
전용 시설	50,000	50,000	20,000	5,000	10,000	20,000	155,000
합계	71,840	87,365	58,054	35,975	42,314	52,314	347,862

출전: 『학사운영협의회자료(2005년 2월)』, 60쪽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대 등), 특정 목적 사업(문제 해결형 인력 양성, 지역 대학 우수 과학자, 여성 과학자 등), 국제 교류 사업, 학술 기반 구축(중점 연구소 등), 대학 기반 지원(BK21 사업), 산학 협력 사업 등의 대분류 체제를 갖추고 더 많은 세부 사업을 집행한다.

한국학술진흥재단 사업 중 BK21 지원 사업은 보편성과 형평성을 추구하던 기존의 교육부 연구 지원 정책과 달리 고등 교육에 최초로 '수월성'에 근거한 '선택과 집중' 원칙을 적용하여 대학원 연구력을 획기적으로 증대하고 경쟁적 연구 풍토를 조성했다. 교육부는 BK21사업의 목표를 세계적 수준의 연구 중심 대학을 육성해 고등 인력 양성 체제를 구축하는 것으로 잡아 1999년부터 2005년까지 7년 동안 총 1조 3,400억 원을 투자했다. 이 사업은 주로 대학원생과 박사후 과정자, 계약 교수 등의 신진 연구 인력을 지원해 학문 후속 세대의 안정적 양성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이 사업이 연구 논문 출판을 촉진하여 과학기술논문색인(SCI) 논문의 국가 순위가 1998년 18위에서 2004년 13위로 상승했고, 서울대학교 순위는 93위에서 31위로 상승했다. BK21 사업을 통해 교육부가 본교에 지원한 금액은 〈표 4-2-31〉과 같다. 이 밖에 한국학술진흥재단이 본교에 지원한 세부 사업에 대한 연구비가 상당할 것이나 그 구체적 내역은 현재 학내 자료로 남아 있지 않다.

### (3) 한국과학재단 연구비

한국과학재단의 연구 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을 자연계 분야로 국한하여 탁월한 기초 연구를 지원한다. 교육부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과학 기술 분야 연구 지원 사업이 비교적 전 분야에 걸친 연구 여건 개선과 인력 양성 등 기반 조성에 주 목적을 둔다면, 과학 기술부와 한국과학재단의 사업은 우수 과학 기술 분야에 선택적·집중적으로 지원하여 탁월한 연구자와 연구 집단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한국과학재단이 본교에 지급한 연구비의 연도별 추이는 <표 4-2-32>와 같다. 본교의 『통계 연보』를 참조하면 한국과학재단의 연구비 지원은 크게 일반 기초(핵심 전문) 연구, 목적 기초(특정 기초, 협력 연구) 연구, 국제 공동 연구, 우수 연구 센터, 장려 연구 센터 등 약 17가지 세부 사업으로 구분된다. 총액으로 볼 때 한국과학재단 연구비는 1989년 본교에 약 30억 원을 지원한 이래 그 액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1990년대 말 약 170억 원을 지원했다. 한국과학재단 지원액 중 우수 연구 센터 연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데, 특히 이 연구비의 과제당 수혜액이 다른 연구비에 비해 매우 크다. 일반 기초 연구나 목적 기초 연구의 경우 과제당 평균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의 연구비를 받았으나 우수 연구 센터의 경우 1990년대 말 과제(센터)당 약 10억 원의 연구비를 받았다.

그런데 한국과학재단에서 발간한 『기초 연구 지원 통계 연보』에 따르면 각 연구 지원

<표 4-2-32> 본교에서 집계한 한국과학재단 세부 과제별 연구비 지원 현황(1989~1998년) (단위: 건, 백만 원)

연도	일반 기초(핵심 전문) 연구		목적 기초(특정 기초, 협력 연구) 연구		국제 공동연구		우수 연구 센터		장려 연구 센터		17개 사업 금액 합계
	과제	금액	과제	금액	과제	금액	센터수	금액	센터수	금액	
1989	92	463	155	2,200	16	49	-	-	-	-	2,886
1990	103	431	141	2,214	11	70	-	-	8	910	3,786
1991	58	518	18	2,392	7	67	10	3,705	4	260	7,279
1992	176	517	152	2,702	38	71	10	5,877	4	120	9,481
1993	154	545	161	2,601	35	154	66	6,137	4	120	9,567
1994	122	785	166	2,668	38	347	44	6,809	6	240	10,935
1995	101	963	162	2,904	43	355	154	8,601	28	240	13,654
1996	200	1,307	112	3,223	38	374	127	10,900	22	240	17,018
1997	107	1,439	132	3,045	36	512	12	11,808	3	300	17,351
1998	97	1,283	119	3,103	47	435	12	10,160	4	400	15,738

출전: 『통계 연보』, 각년판에서 작성. 이 자료 중 1993~1996년의 우수 연구 센터와 장려 연구 센터 수 산정에서 오류가 있다. 실제로 이 시기 우수 연구 센터 수는 매년 10여 개, 장려 연구 센터 수는 3~4개였다.

사업의 분류 체계나 재단이 본교에 지원한 연구 과제 수와 금액이 본교의 공식 통계와 크게 다르다. 한국과학재단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표 4-2-33>과 <표 4-2-34>는 서울대학교 통계인 <표 4-2-32>와 큰 차이가 있다. 서울대학교 자료는 연구 지원 사업의 분류 체계를 1980년대 말 기준으로 산정했고, 한국과학재단 자료는 시기에 따른 연구 지원 사업의 변화를 반영하여 작성했다. 양측 자료에서 수치가 다른 이유는 기준 연도의 산정 방식이나 여타 집계 방식의 차이 때문이나 현재 정확한 이유를 밝힐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

한국과학재단은 1978년 일반 기초 연구 사업을 실시했고, 이를 1983년 일반 목적 기초 연구 사업으로 확대했다. 또 1986년 특정 목적 기초 연구 사업을 신설하여 1989년까지 일반 목적 기초 연구 사업과 함께 두 사업을 별도로 수행했으나 1992년 일반 목적 기초연구와 특정 목적 기초 연구를 목적 기초 연구로 통합하면서 목적 기초 연구의 세부

<표 4-2-33> 한국과학재단의 세부 과제별 연구비 지원 현황(1991~1994년) (단위: 건, 백만 원)

연도	목적 기초 연구 지원 사업						우수 연구 집단 육성 사업				합계
	핵심 전문 연구		특정 기초 연구		협력 연구		우수 연구 센터		장려 연구 센터		
	과제	금액	과제	금액	과제	금액	과제	금액	과제	금액	
1991	100	524	81	2,750	4	74	10	3,750	4	120	7,173
1992	84	499	63	2,563	5	117	10	5,877	4	120	9,175
1993	75	554	52	2,439	4	111	10	6,137	4	120	9,190
1994	86	791	61	2,667	5	166	10	6,809	3	240	10,673

출전: 한국과학재단, 『기초 연구 지원 통계 연보』, 각년판에서 작성.

<표 4-2-34> 한국과학재단의 세부 과제별 연구비 지원 현황(1995~1999년) (단위: 건, 백만 원)

연도	목적 기초				우수 연구 센터				국제 공동 연구		산학 협력 연구		특성화 장려		금액 합계
	핵심 전문 연구		특정 기초 연구		우수 연구 센터		장려 연구 센터		국제 공동 연구		산학 협력 연구		특성화 장려		
	과제	금액	과제	금액	과제	금액	과제	금액	과제	금액	과제	금액	과제	금액	
1995	93	1,050	66	3,051	11	8,234	3	240	11	145	8	158	12	769	13,647
1996	107	1,392	72	3,395	11	9,938	3	240	24	450	8	202	12	556	16,173
1997	102	1,542	59	3,301	12	11,809	3	300	35	614	5	239	20	1,034	18,859
1998	98	1,424	60	3,527	12	10,360	4	400	20	309	12	417	17	996	17,609
1999	43	607	76	5,330	12	10,777	4	400	26	394	10	123	16	1,411	19,288

출전: 한국과학재단, 『기초 연구 지원 통계 연보』, 각년판에서 작성.

사업을 핵심 전문 연구, 특정 기초 연구, 협력 연구로 재분류했다. 핵심 전문 연구 사업은 과학 기술 분야에서 창의성이 높은 기초 연구 과제를 교수 연구실 단위로 지원하며 1990년대 중반 연구비를 크게 증액했으나 이후 재단이 특정 기초 연구 사업을 확대하면서 1999년 종료하였다.

특정 기초 연구 사업은 국가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는 문제 지향적 연구 과제 중 학제 간 공동 연구를 강화하여 대학의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시작하였다. 이 사업은 여러 분야가 관련된 학제 간 연구 과제를 우선 지원했으며 1998년 국가 연구 개발 사업 평가에서 우수한 사업으로 인정받아 1999년부터 사업비를 크게 확충했다. 특성화 장려 사업은 대학 연구 활동의 주요 요소가 되는 연구 기기, 연구 소재, 연구 정보에 대한 인프라 기지 구축을 위하여 1995년도부터 시행했고, 본교에 연간 5억에서 10억여 원의 자금을 제공했다.

한국과학재단은 2000년 선도 과학자 육성, 지역 대학 우수 과학자, 우수 여성 과학자 도약 연구, 유망 여성 과학자 경쟁력 강화, 2002년 기초 의과학 연구 센터, 선도 기초 과학 연구실, 2003년 젊은 과학자 연구 활동 지원, 국가 핵심 기초 연구 센터 등 신규 사업을 개발 시행했다. 2000년대에 들어 신규 사업이 증가하면서 한국과학재단의 연구 사업 체계는 해마다 바뀌었다. 2003년 이후 한국과학재단은 사업의 대분류 체제를 개인/소규모 연구 지원 사업(기존의 목적 기초 연구 사업), 센터 육성 사업, 특성화 장려 사업 등으로 정리했다. 2003년도 한국과학재단이 본교에 지원한 연구비는 <표 4-2-35>와 같다.

2004년부터 과학기술부는 창의적 연구 진흥 사업을 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한국과

<표 4-2-35> 한국과학재단의 본교 연구비 지원 현황(2003년)

(단위: 건, 백만 원)

개인/소규모 연구 지원 사업												국가 핵심	
특정 기초 연구		선도 과학자 육성		지역 대학 우수 과학자		젊은 과학자 연구 활동		우수 여성 과학자 도약 연구		유망 여성 과학자 경쟁력 강화		연구 센터 육성 사업	
과제	금액	과제	금액	과제	금액	과제	금액	과제	금액	과제	금액	과제	금액
72	5,509	16	1,364	1	19	16	1,073	16	322	5	198	1	2,000
센터 육성 사업						특성화 장려 사업						합계	
우수 연구 센터		기초 의과학 연구 센터		선도 기초 과학 연구실		고가 연구 기기		특수 연구 소재		전문 연구 정보			
과제	금액	과제	금액	과제	금액	과제	금액	과제	금액	과제	금액	과제	금액
13	13,015	1	300	6	1,201	19	549	2	246	4	982	172	26,778

출전: 과학기술부, 한국과학재단, 2004, 『기초 연구 지원 성과·통계 연보』, 141-142쪽에서 작성.

〈표 4-2-36〉 한국과학재단의 본교 연구비 지원 현황(2004년)

(단위: 건, 백만 원)

개인/소규모 연구 지원 사업												창의적 연구 진흥 사업	
특정 기초 연구		선도 과학자 육성		젊은 과학자 연구 활동		우수 여성 과학자 도약 연구		유망 여성 과학자 경쟁력 강화		국가 핵심 연구 센터 육성 사업			
과제	금액	과제	금액	과제	금액	과제	금액	과제	금액	과제	금액	과제	금액
67	5,504	10	1,360	28	1,935	2	78	9	192	1	1,500	15	9,510

센터 육성 사업						특성화 장려 사업				합계	
우수 연구 센터		기초 의과학 연구 센터		선도 기초 과학 연구실		고가 연구 기기 특수 연구 소재		전문 연구 정보			
과제	금액	과제	금액	과제	금액	과제	금액	과제	금액	과제	금액
12	11,638	1	350	6	1,201	2	234	4	888	163	34,435

출전: 과학기술부, 한국과학재단, 2005, 『기초 연구 지원 성과·통계 연보』, 107-108쪽에서 작성.

학재단으로 이관했다. 이에 한국과학재단 연구 사업 항목이 〈표 4-2-36〉처럼 약간 변했다. 이 해에는 본교에 지역 대학 우수 과학자, 고가 연구 기기 사업 지원이 없었다. 또 2004년 과학기술부와 교육부가 기초 과학 지원 업무를 조정하면서 2005년부터 개인/소규모 연구 지원 사업 상당수를 교육부로 이관했다. 이에 한국과학재단은 사업 분류 체계를 대폭 개편하여 2006년 현재 특정 기초 연구 사업(특정 기초 연구, 최고 과학자 연구 지원), 우수 연구 집단 육성(우수 연구 센터(SRC/ERC), 기초 의과학 연구 센터(MRC), 국가 핵심 연구 센터(NCRC), 창의적 연구 진흥), 기초 연구 기반 구축(국가 지정 연구 소재 은행, 전문 연구 정보 센터)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한국과학재단 연구 지원 사업 중 비중이 가장 크고 장기적으로 진행한 사업은 우수 연구 센터 육성 사업이다. 이 사업은 새로운 지식 생산을 목표로 하는 과학 연구 센터(SRC: Science Research Center)와 산업계 응용을 목표로 하는 공학 연구 센터(ERC: Engineering Research Center)를 지원했다. 과학 연구 센터는 과학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 기초 과학을 연구하며, 국제 수준의 질 높은 논문을 발표해 노벨상에 도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기술 개발에 필요한 기초 지식을 정립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공학 연구 센터는 산업 수요가 높은 첨단 산업 분야의 기초 기술을 중점 연구하며, 국제 수준의 원천 기술을 창출하는 능력을 배양하고 학제 간, 산학 간 협력을 바탕으로 관련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었다. 재단은 지정한 센터에 매년 사업비로 10억 원 내외를 9년까지 지원하되(사업 초기에는 3~7억 원), 3년 단위로 중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계속 지원(확대, 현상 유지, 축소) 또는 지원 중단 여부를 결정했다.

한국과학재단은 1990년 3월 본교 이론물리학센터, 분자미생물학연구센터, 신소재박막 및 결정성장연구센터 3곳을 우수 연구 센터로 선정했고, 본교는 같은 해 6월에 '과학공학연구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통칙'(규정 제808호)을 제정하여 연구 센터 출범을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위 연구 센터 3곳이 동년 7월 일제히 개소하고 한국과학재단이 지원하는 연구 예산을 바탕으로 연구 활동에 돌입했다. 1991년 대역해석학연구센터 등 연구 센터 7곳이 제2차 과학 공학 우수 연구 센터로 선정되어 본교의 우수 연구 센터는 10곳으로 증가했다. 1995년 분자촉매연구센터, 1997년 지진공학연구센터, 1999년 복합다체계연구센터 등 3곳, 2000년 복잡계의통계연구센터 등 4곳, 2001년 마이크로열시스템연구센터 등 2곳, 2002년 노화및세포사멸연구센터 등 2곳의 신규 센터가 발족했다. 1998년 1차 우수 센터로 선정된 센터 3곳이 9년 간의 사업을 종료했고, 1999년에는 2차 7곳, 2003년 센터 1곳이 사업을 종료했다. 2004년 현재 본교 우수 연구 센터는 총 12곳이다. 센터를 신설하거나 폐쇄한 수를 감안하여 연도별로 살펴보면 <표 4-2-37>과 같이 해마다 10여 곳의 센터가 있었고, 1990년부터 2004년까지 누적 합산할 때, 센터 159곳이 약 1,300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았다.

1990년부터 2004년 현재까지 전국 우수 연구 센터 수와 본교 우수 연구 센터 수를 분야별로 비교하면 <표 4-2-38>과 같다. 누적하여 보면 전국적으로 우수 연구 센터가 총 664곳 있었고, 본교는 이 중 159곳이 우수 연구 센터 지원을 받아 전국 대비 24%의 비중을 차지했다. 분야별로는 과학과 공학 분야가 농수산, 기초 의학학 분야보다 더 많이 지원을 받았으며, 과학과 공학 분야만 볼 때 전국이나 본교 모두 각 분야별로 비교적 고르게 지원받았다.

<표 4-2-37> 서울대학교 우수연구센터 지원 현황(1990~2004년)

(단위: 곳, 백만 원)

연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센터 수	3	10	10	10	10	11	11	12
금액	700	3,705	5,877	6,137	6,809	8,234	9,938	11,809
연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합계
센터 수	12	12	9	11	13	13	12	159
금액	10,360	10,777	7,660	11,053	12,467	13,015	11,683	130,224

출전: 한국과학재단, 『기초연구지원 통계연보』, 각년판과 『기초연구지원 성과·통계연보』, 각년판에서 작성.

〈표 4-2-38〉 분야별 우수연구센터 지원 수(1990~2004년)

(단위: 곳)

센터		합계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지구 과학	농수산	기초 의약학	재료 공학	전기·전자 ·컴퓨터 공학	기계 공학	화학 공학	토목· 건축
서울대	누적	159	14	15	9	18	5	15	26	9	18	13	9	8
	실제	23	2	2	1	2	1	2	4	1	3	2	2	1

출전: 한국과학재단, 『기초연구지원 통계연보』, 각년판과 『기초연구지원 성과·통계연보』, 각년판에서 작성.

〈표 4-2-39〉 서울대학교 우수연구센터 지원 현황(1990~1999년)

(단위: 백만 원)

구분	센터	책임자	연도별 지원액											센터별 합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SRC	이론물리학센터	송희성	200	420	377	432	500	584	803	932	730	-	4,978	
	분자미생물학 연구센터	하영칠	300	880	719	710	805	950	1,270	1,151	1,000	-	7,785	
ERC	신소재박막및결정 성장연구센터	이동녕	200	705	817	530	613	690	738	984	780	-	6,057	
SRC	대역해석학 연구센터	김상문	-	200	439	440	640	630	742	912	670	670	5,343	
	세포분화연구센터	강만식	-	300	647	690	670	810	773	954	835	845	6,524	
	암연구센터	박재갑	-	300	594	730	590	710	1,013	1,074	915	905	6,831	
	농업생물신소재 연구센터	박관화	-	300	654	662	879	820	1,028	1,413	1,120	1,191	8,067	
ERC	신의약품개발 연구센터	주상섭	-	200	425	628	670	790	818	694	670	750	5,645	
	제어계측신기술 연구센터	권옥현	-	200	547	655	720	830	1,096	1,148	1,020	1,120	7,336	
	터보동력기계 연구센터	노승탁	-	200	658	660	722	840	961	1,154	905	921	7,021	
계			700	3,705	5,877	6,137	6,809	7,654	9,242	10,416	8,645	6,402	65,587	

출전: 한국과학재단, 『기초연구지원 통계연보』, 각년판에서 작성.

본교 우수 연구 센터의 연도별 지원 현황은 〈표 4-2-39〉, 〈표 4-2-40〉과 같다. 한국 과학재단은 2005년 본교에 세포기능제어연구센터와 지능형텍스타일시스템연구센터 두 곳을 새로 선정하여 우수 연구 센터는 총 14곳이 되었다.

〈표 4-2-40〉 서울대학교 우수연구센터 지원 현황(1995~2005년)

(단위: 백만 원)

구분	센터	책임자	연도별 지원액											센터별 합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SRC	분자촉매연구 센터	서정현	580	696	868	965	1,025	940	1,250	1,080	900	-	-	8,304
ERC	지진공학연구 센터	장승필	-	-	525	750	1,270	940	1,050	990	1,000	873	776	8,174
SRC	복합다체계 연구센터	오세정	-	-	-	-	740	1,200	1,210	1,337	1,271	1,243	1,163	8,164
	식물분자유전 육종연구센터	김병동	-	-	-	-	670	1,140	1,050	930	961	942	1,053	6,746
ERC	고차구조형유기 산업재료연구센터	조원호	-	-	-	-	670	990	1,125	1,240	1,172	1,125	1,121	7,443
SRC	복잡계의통계 연구센터	전종우	-	-	-	-	-	530	840	790	850	825	824	4,659
	기후·대기환경 시스템연구센터	강인식	-	-	-	-	-	596	940	890	810	792	785	4,813
ERC	지능형생체계면 연구센터	정종평	-	-	-	-	-	662	1,050	990	930	903	903	5,438
	초미세생체전자 시스템연구센터	김성준	-	-	-	-	-	662	1,110	1,040	1,061	1,028	1,024	5,925
ERC	마이크로열 시스템연구센터	이준식	-	-	-	-	-	-	720	990	1,030	1,030	1,014	4,784
	생체계측신기술 연구센터	박광석	-	-	-	-	-	-	708	990	1,000	970	970	4,638
SRC	노화및세포사멸 연구센터	박상철	-	-	-	-	-	-	-	600	1,030	1,018	1,111	3,759
ERC	에너지변환저장 연구센터	오승모	-	-	-	-	-	-	-	600	1,000	970	999	3,569
SRC	세포기능제어 연구센터	성노현	-	-	-	-	-	-	-	-	-	-	1,043	1,043
ERC	지능형텍스타일 시스템연구센터	강태진	-	-	-	-	-	-	-	-	-	-	927	927
계			580	696	1,393	1,715	4,375	7,660	11,053	12,467	13,015	11,719	13,713	78,386

출전: 한국과학재단, 『기초연구지원 통계연보』, 각년판과 『기초연구지원 성과·통계연보』, 각년판에서 작성.



#### (4) 기타 정부 기관 연구비

본교 연구비 재원에서 정부 기관 중 교육인적자원부/한국학술진흥재단과 한국과학재단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나, 이 기관들 외에도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등 과학 기술 계통의 정부 기관 역시 본교에 상당액의 연구비를 지원했다. <표 4-2-41>에 과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가 1986년부터 1998년까지 본교에 지원한 연구비 현황을 정리했다. 비록 본교 통계나 각 기관 통계에서 과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가 본교에 지원한 연구비의 세부 현황을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양 기관의 연구비 지원액 규모는 상당히 컸다.

이 기관들의 연구 개발 사업 중 과학기술부의 특정 연구 개발 사업이 주목할 만하다. 특정 연구 개발 사업 중 1990년대 후반에 시작한 창의적 연구 진흥 사업은 1997년부터 2004년까지 본교에 20개 사업단을 설치하여 연구비를 지원했다. 연구비 세부 내역에 대한 자료는 없으나, 2004년을 기준으로 그 선정 현황을 정리하면 <표 4-2-42>와 같다. 앞에서 서술했듯이 2004년 이후 창의적 연구 진흥 사업은 한국과학재단에 이관되었다.

<표 4-2-41>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교원 연구비 지원 현황(1986~1998년)

(단위: 백만 원)

연도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1986	596	-
1987	1,019	126
1988	1,375	3,156
1989	1,582	2,346
1990	2,025	4,867
1991	1,392	2,697
1992	1,537	2,424
1993	4,285	2,532
1994	4,687	3,358
1995	7,117	4,933
1996	6,650	3,557
1997	13,421	4,077
1998	14,477	5,701

비고: 1. 과학기술부는 1967년부터 1998년까지 '과학기술처'였다가 1998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2. 1977년 신설한 동력자원부는 3차례 명칭 변경 후 현재 '산업자원부'가 되었다. 그동안 명칭은 동력자원부(1977~1993년) → 상공자원부(1993~1994년) → 통상산업부(1994~1998년) → 산업자원부(1998년~현재) 순으로 바뀌었다.

출전: 『통계연보』, 각년판에서 작성.

〈표 4-2-42〉 과학기술부 지원 창의적연구진흥사업단 선정 현황(1997~2004년)

선정 연도	연구단	단장
1997	나노입자제어기술연구단	최만수
	난류제어연구단	최해천
	통증발현연구단	오우택
	유전자재프로그래밍연구단	임정빈
	재료미세조직연구단	김도연
	나노기억매체연구단	국양
	동력학적반응유도연구단	김명수
	광력분석연구단	정두수
	근접장이용극한광기술연구단	제원호
	휴먼애니메이션연구단	고형석
	단백질합성효소네트워크연구단	김성훈
1998	이온-표면반응성산란연구단	강현료
1999	순간포착분자운동연구단	김성근
	3차원밀리미터파연구단	권영우
2000	치매정복연구단	서유현
	산화물전자공학연구단	노태원
	암흑물질탐색연구단	김선기
2002	멀티스케일설계연구단	김윤영
	산화물나노결정연구단	현택환
2004	혈관·신경계통합조절연구단	김규원

출전: 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ost.go.kr)의 과학기술통계 DB를 참조하여 작성.

특정 연구 개발 사업 중 국가 지정 연구실 사업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본교 우수 연구실 총 70곳을 선정하여 지원했다. 국가 지정 연구실 사업은 국가 경쟁력의 요체가 될 핵심 기술 분야의 우수 연구실을 발굴 육성하여, 산업 기반이 되는 핵심 기술을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켜, 산업계, 학계, 연구 기관의 과학 기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과학기술부가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한 연구실은 연간 3억 원 내외의 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선정 2년 후 단계 평가를 거쳐 최장 5년 동안 안정적인 지원을 받는다.

그 외 한국과학재단을 제외한 정부 기관에서 본교에 지원하는 연구 센터 사업은 매우 다양하며, 2003년도를 기준으로 정리해 보면 〈표 4-2-43〉과 같다.

〈표 4-2-43〉 한국과학재단 외 정부 지원 연구센터(단) 현황(2002~2003년)

연구 센터	설립 연도	보유 장비 금액 규모 (백만 원)	운영 예산(천 원)		연구 과제(건)		연구비(천 원)		지원 기관
			2002	2003	2002	2003	2002	2003	
수중음향특화연구센터	1997	188	40,537	43,191	14	13	858,434	942,800	국방과학연구소
e-비즈니스기술연구센터	2002	115	30,000	50,031	5	7	500,000	900,000	정보통신연구 진흥원
임플란트용기능성의료용 신소재연구센터	2002	1,410	40,727	41,177	5	5	1,183,000	1,075,000	한국보건산업 진흥원
자동제어특화연구센터	1994	427	16,908	62,671	13	13	970,394	958,743	국방과학연구소
피부감염세균유전체 연구센터	2002	210	2,600	2,600	4	4	1,543,000	1,072,000	한국보건산업 진흥원
한국디자인산업연구센터	2002	409	310,400	202,520	1	1	700,000	691,000	산업자원부
에너지변환/저장연구센터	2002	-	96,315	129,586	15	15	750,000	750,000	산업자원부
핵변환에너지연구센터	2002	35.4	-	-	8	8	568,944	593,550	한국전력연구원
교량설계핵심기술연구단	2003	112	-	-	-	-	-	-	한국건설교통 기술평가원
패션신소재연구센터	2003	602	-	7,000	-	4	-	1,062,000	산업자원부
차세대무선통신연구센터	2000	389	0	50,000	1	1	420,000	870,000	정보통신연구 진흥원

출전: 『서울대학교 백서(2002~2003)』, 83쪽.

### (5) 대학 내부 연구비와 각종 재단 연구비

#### ① 서울대학교 발전 기금과 대학 외부 각종 재단의 연구비 지원(1990~1998년)

본고는 1967년 설립한 서울대학교 학술연구재단을 1990년 5월 서울대학교 장학회와 통합하여 재단법인 서울대학교 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으로 전환했다. 발전기금의 수익금을 재원으로 일반 학술 연구비를 지원했는데, 그 지원 방침은 다음과 같았다.

1. 기초 학문의 균형적인 연구 활동 조성을 위해 가능한 한 전 학문 분야에 지원
2. 외부 기관 연구비 지원이 적은 분야에 우선 지원
3.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로 우수 연구 과제 선정 지원
4. 인문 사회 과학 분야 저술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저술 연구비 지원
5. 신임 교수의 연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소한의 연구비 지원

이에 따라 본교는 1990년대 일반 학술 연구비를 일반 연구, 저술 연구, 신입 교수 연구 등으로 나누어 지원했다. 일반 연구는 전 학문 분야를 대상으로 공동 연구의 경우 연간 2천만 원 이내에서, 단독 연구의 경우 연간 1천만 원 이내에서 연구비를 지원했다. 저술 연구는 주로 인문학과 사회 과학 분야를 대상으로 연간 1천만 원 이내에서, 신입 교수 연구는 연간 3백만~5백만 원 이내에서 연구비를 지원했다.

발전기금 외에도 1990년대에는 대학 외부의 각종 학술 재단과 기타 기관에서 연구비를 지원했는데, 발전기금 일반 학술 연구비와 주요 외부 재단의 연구비 지원 상황은 <표 4-2-44>와 같다.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발전기금보다 외부 재단의 연구비 지원이 월등히 많았으나, 1990년대 후반에는 외부 재단의 연구비가 현저하게 감소하거나 중단된 반면 발전기금 학술 연구비는 꾸준히 증가했다. 외부 재단 중 산학협동재단과 아산사회복지재단이 연구비 지원을 비교적 꾸준히 해 왔으나 발전기금을 포함한 13기관이 지원한 연구비 총액 중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작은 편이다.

발전기금과 산학협동재단 등 각종 학술 재단, 기타 기관이 지원하는 연구비는 대체로 본교 전체 학술 연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은 편이다. 1997년과 1998년 본교 학술 연구비 총액이 600억 원을 상회하는데 발전기금을 포함하는 각종 재단의 연구비 총액은 20억 원 정도로 전체 학술 연구비의 약 3%에 불과했다.

<표 4-2-44> 서울대학교 발전기금과 기타 기관 연구비(1987~1998년)

(단위: 건, 백만 원)

지원 기관	1987		1990		1993		1995		1997		1998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발전기금 학술 연구비	53	167	21	120	133	724	150	979	135	982	134	1,277
수암장학문화재단	-	-	-	-	4	20	5	25	4	20	2	10
아산사회복지재단	17	22	14	59	2	21	2	21	3	30	3	25
산학협동재단	17	41	11	79	13	64	6	37	7	107	-	-
포항제철(주)	-	-	-	-	2	11	3	52	2	20	3	25
대산농촌문화재단	-	-	-	-	6	34	5	22	5	21	-	-
한국통신연구개발단	-	-	-	-	17	568	14	647	12	155	-	-
일주학술문화재단	-	-	-	-	10	125	21	330	11	65	-	-
합계(13기관)	126	397	131	1,630	219	2,401	379	7,007	176	1,701	182	2,116

출전: 『통계연보』, 각년판에서 작성.

## ② 대학 내부 연구비와 교내 연구 사업(1998~2005년)

본교 『통계 연보』의 학술 연구비는 1990년대 말까지 본교 발전기금과 교외 각종 재단, 기타 기관의 연구비를 모두 ‘각종 재단’으로 합하여 집계했다. 그런데 1990년대 말 각종 재단 연구비 중 발전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면서 대학 내부 연구비를 여타 기관과 별도로 집계하기 시작했다. 내부 연구비는 1999년까지 대체로 발전기금을 의미했으나, 2000년부터 간접 연구 경비와 단과대학 연구비 등 기타 재원이 증가하면서 2003년에는 내부 연구비 중 발전기금 비율이 약 50%로 줄어들었다. 2003년 발전기금과 간접 연구 경비 등 내부 재원으로 확보한 교내 연구비는 전체 학술 연구비 2400억 원의 4% 수준인 96억 원이다(〈표 4-2-45〉 참조).

본교는 발전기금과 간접 연구 경비 등을 재원으로 하는 내부 연구비를 연구 여건 강화와 특정 학문 분야 육성을 위한 교내 연구 사업에 활용했다. 발전기금을 재원으로 일반 학술 연구 사업을 2002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나, 2002년 신입 교수 연구비(37과제)와 일반 학술 연구비(51과제) 지원을 끝으로 2003년부터 일반 학술 연구비 사업을 중단했다. 또 학제 간 협력 연구 사업을 추진하여 학제 협력 연구를 활성화하고 연구를 질적으로 향상해 부속 연구소(원)의 학제 연구 기능을 높이고자 했다. 2002년 학제 간 협력 연구 사업으로 인문·사회 분야와 예체능 분야 12과제, 이공·의학 분야, 치의학 분야 12과제를 지원했다.

교내 연구 사업 가운데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한국학 연구 사업과 통일학 연구 사업을 주목할 만하다. 한국학 연구 사업은 한국학과 관련한 교수의 연구 역량을 키우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 정치, 사회 등을 아우르는 한국학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하여

〈표 4-2-45〉 내부 연구비 재원별 구성(1998~2005년)

(단위: 천 원, %)

연도 재원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2,988,396	3,388,758	3,400,746 (69.9%)	3,581,081 (62.9%)	3,945,118 (71.8%)	4,880,981 (50.6%)	5,455,664 (56%)	3,366,329 (41.3%)
기타	-	-	1,465,657 (30.1%)	2,110,049 (37.1%)	1,546,898 (28.2%)	4,766,922 (49.4%)	4,279,742 (44%)	4,793,364 (58.7%)
합계	2,988,396	3,388,758	4,866,403	5,691,130	5,492,016	9,647,903	9,735,406	8,159,693

비고: 1. 기타 연구비는 간접 연구 경비, 단과대학 연구비 등이다.

2. 괄호 속은 해당 연도별로 전체에서 각 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출전: 『서울대학교 백서』, 각년판과 연구처 제공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표 4-2-46〉 교내 연구사업 지원 실적(2002~2004년)

(단위: 건, 천 원)

사업	2002		2003		2004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일반 학술 연구 사업	88	660,000	-	-	-	-
학제 간 협동 연구 사업	24	830,000	-	-	-	-
한국학 연구 사업	66	920,000	33	853,850	35	900,000
통일학 연구 사업	-	-	22	838,000	17	920,000

출전: 『학사운영협의회자료』, 각년판에서 작성.

본교를 '한국학의 메카'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연간 10억 원 규모의 연구비를 지원하며 단독 연구의 경우 과제당 1천만 원에서 1천 5백만 원, 공동 연구의 경우 과제당 5천만 원, 연구소(원)의 경우 1억 원 이내에서 연구비를 지원한다. 통일학 연구 사업은 통일 이후에 발생할 문제와 과제들을 예상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본교가 국제적으로 남북 관계와 통일 문제의 중심축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연간 10억 원 규모의 연구비를 지원하며 기획 과제, 단독 과제, 박사학위논문 지원, 통일 포럼 지원 등의 세부 사업을 추진한다.

이상으로 시기별, 재원별로 연구비 지원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초창기부터 캠퍼스 종합화(1975년)까지 연구 재원은 주로 문교부에 국한되었으며, 그 외 민간 재단이나 정부 부처의 단기적이고 중기적인 연구비 지원이 있었다. 그러나 이 시기 동안 전반적으로 연구비 지급 규모가 작았고, 국립대학 교수의 부족한 월급을 보조하는 정도에 그쳤다. 종합화 이후 주요 연구 재원이 문교부와 과학기술부로 이원화되었으며, 특히 1980년대 이후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연구비 지원액이 크게 상승했다.

1980년대 말 본교는 연구 중심 대학을 대학의 이상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개선을 시도했다. 정부 역시 대학 연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전과 달리 대학 연구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는데, 과학기술부의 우수 연구 센터 사업이 대표적인 예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교육부는 본교를 세계적 수준의 우수 연구 중심대학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했고, 1999년부터 두뇌한국 21 사업을 통해 이를 실현하고자 했다. 서울대학교와 한국 정부가 본교를 세계 일류의 연구 중심 대학

으로 만든다는 공통 목표를 향해 매진하면서 본교는 최근 10여 년간 놀라운 발전을 이룩하였다.

### 제3절 교수 연구 업적

#### 1) 교원 확충과 연구 업적의 증가(1962년~1980년대 전반)

개교 이후 1950년대까지 본교 교수의 연구 업적은 그리 많지 않았다. 이는 해방과 분단, 한국전쟁 등 정치적·사회적 불안과 초창기 학문 연구의 미성숙 때문이었다. 이 무렵 본교가 발간한 학술지를 보더라도 1952년에 발간한 『문리대 학보』, 1954년의 『서울대 논문집』, 1962년 생약연구소의 『업적집』이 전부였다. 그러나 1960년대에 이르러 연구 활동이 본궤도에 오르자 연구 업적이 크게 증가했다.

우선 전체 연구 업적을 인문·사회계와 자연계로 나누어 정리하면 <표 4-2-47>과 같다. 1962년 900건인 연구 업적은 1974년 1,400건, 1976년 2,000건 이상으로 증가했고, 1982년 3,000건을 넘어섰다. 연구 업적의 양적 증가는 대학 팽창에 따른 교수 수 증가와 깊은 관련이 있다. 본교 교수 수는 1962년 285명이었으나 1969년 525명, 1975년 784명, 1979년 1,005명으로 증가했으며, 1984년에는 1,150명에 이르렀다. 결국 1962년부터 1984년까지 22년 동안 교수 수가 4배 증가하면서 연구 업적도 4배로 증가했다. 연구 업적을 교수의 인원으로 나누어 교수 일인당 평균치를 산정해 보면 1962년 3.2건, 1967년 2.3건, 1972년 2.8건, 1977년 3.1건, 1982년 3.0건으로, 교수 1인당 평균 연구

<표 4-2-47> 교수 연구 업적(1962~1984년)

(단위: 건)

연도 분류	1962	1964	1966	1968	1970	1972	1974	1976	1978	1980	1982	1984
인문·사회계	309	305	340	815	657	668	656	1,048	984	986	1,191	994
자연계	594	521	615	903	756	1,017	1,094	1,066	992	1,552	2,042	2,067
총수	903	826	955	1,718	1,423	1,685	1,750	2,114	1,976	2,538	3,233	3,061

비고: 연구 업적은 논문, 저서, 번역, 기타를 포함한다. 기타는 발표회, 서평, 평론, 시평 등이다.

출전: 『서울대학교 40년사』, 612쪽.

〈표 4-2-48〉 교수 논문 발표 상황(1962~1984년)

(단위: 편)

분류	연도											
	1962	1964	1966	1968	1970	1972	1974	1976	1978	1980	1982	1984
인문·사회계	134	180	208	329	335	402	496	352	512	564	657	662
자연계	462	491	566	767	710	867	908	925	736	1,426	1,839	1,164
계	596	671	774	1,096	1,045	1,262	1,404	1,277	1,248	1,990	2,496	1,826

출전: 『서울대학교 40년사』, 613쪽.

〈표 4-2-49〉 교수 저서 출판 상황(1962~1984년)

(단위: 권)

분류	연도											
	1962	1964	1966	1968	1970	1972	1974	1976	1978	1980	1982	1984
인문·사회계	65	43	25	48	43	78	100	124	82	101	206	131
자연계	89	30	30	59	28	86	74	86	63	69	79	131
계	154	73	55	107	71	164	174	210	145	170	285	262

출전: 『서울대학교 40년사』, 614쪽.

〈표 4-2-50〉 교수 번역 활동 상황(1962~1984년)

(단위: 권)

분류	연도											
	1962	1964	1966	1968	1970	1972	1974	1976	1978	1980	1982	1984
인문·사회계	13	3	9	23	31	36	31	39	40	24	33	48
자연계	23	-	4	29	15	7	20	14	14	3	8	56
계	36	3	13	52	46	43	51	63	54	27	41	104

출전: 『서울대학교 40년사』, 615쪽.

업적은 1960년대와 1980년대가 별 차이가 없다. 연구 업적의 양을 인문 사회계와 자연계로 나누면 대체로 1 : 2의 비율이다.

논문과 저서, 번역 등 개별 업적을 중심으로 보면, 먼저 논문은 1962년 596건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1980년대 들어 평균 약 2천 건에 이르렀다(〈표 4-2-48〉). 인문·사회계와 자연계의 논문 편수를 비교해 보면, 전체적으로 자연계가 인문·사회계보다 두 배 정도 많다.

저서 출판은 〈표 4-2-49〉에서 보듯이 약간 기복이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증가 추세였다. 1960년대의 교수 저서 출간은 매년 100권 미만이었고, 1970년대에 들어 100~200권, 1980년대에 이르러 200권대를 넘어섰다. 인문·사회계와 자연계의 저서



간행 수를 비교해 보면 논문과는 달리 전체적으로 인문·사회계가 자연계보다 많았다.

번역 역시 꾸준한 양적 증가를 보여, 1974년 50권, 1984년에 100권을 넘었다. 저서 출판과 마찬가지로 번역 활동도 인문 사회계가 자연계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표 4-2-50〉).

## 2) 연구 업적의 급증(1980년대 후반~2006년)

서울대학교는 1983년까지 교수가 발표한 연구 업적 목록을 각 교수별 연구 기록 카드에 기재하여 보관했으나, 1984년부터 저서와 학술 논문 등 교수 연구 업적을 매년 집계하여 1987년부터 그 내용을 묶어 『연구 업적집』을 발간했다. 이때부터 교수 연구 업적을 단행본, 학술 논문, 특허, 예·체능계 작품 발표와 연주, 기타(종설, 해설, 서평, 학술 회의 논문 발표) 등으로 분류하고, 그중에서 단행본을 저서/역서/편저로, 학술 논문을 정기 학술지 게재 논문/학술회의 논문집 게재 논문/기타 논문집 게재 논문으로 구분했다. 또 학술 회의 논문 요약집이나 초록집에 게재한 논문은 학술 논문에서 제외하여 종설, 해설, 서평 등과 함께 기타로 집계했다.

〈표 4-2-51〉은 1988년부터 2003년까지 본교 교수의 연구 업적을 총괄한 자료이다. 1980년대 말부터 연구 업적은 꾸준히 증가하여 1988년 총 4,555건에서 2003년 19,035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본교 전체 교수 수가 1,291명에서 1,786명으로 1.4배 증가한 것에 비하면 상당한 진전이다. 전체 교수를 기준으로 교수 1인당 평균 연구 업적은 같은 기간 3.53건에서 10.66건, 자료 제출 교수를 기준으로 한 교수 1인당 평균 연구 업적은 4.46건에서 12.83건으로 약 3배 증가했다.

교수 연구 업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단행본과 논문의 연도별 추이는 〈표 4-2-52〉와 같다. 단행본 발간은 1990년대 중반까지 증가 추세이나, 2000년 이후 감소하여 연 6백 권에 머물렀다. 단행본 중 저서의 비율은 역서나 편저에 비해 월등히 높으며 70~80% 정도였다. 1980년대 말 이후 2005년 현재까지 학술 논문 출판은 8배 이상으로 꾸준하게 증가했고, 전체 교수 기준으로 교수 1인당 평균 논문 실적 역시 1988년 2.05편에서 2005년 10.8편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본교는 국제화 흐름과 함께 국제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수를 연구 업적의 주요 지표로 취급했다. 〈표 4-2-53〉에 1988년부터 1994년까지 본교 교수들이 외국 학술지에 발

〈표 4-2-51〉 교수 연구 업적 상황(1988~2003년)

구분	연도									
	1988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3	
단행본(권)	282	313	407	631	626	822	1,054	832	644	
논문(편)	2,471	2,960	3,814	6,664	7,884	10,198	10,990	9,397	9,108	
특허(건)	-	-	-	-	-	-	6	19	90	
연주·작품 발표(회)	373	212	274	447	401	531	517	540	376	
기타	1,339	2,217	2,254	5,848	4,530	6,055	7,586	9,814	8,907	
총계	4,555	5,807	6,798	13,708	13,597	17,989	20,728	20,583	19,035	
전체 교수 수(명)	1,291	1,320	1,359	1,408	1,509	1,603	1,627	1,656	1,786	
자료 제출 교수 수(명)	1,021	1,061	1,189	1,250	1,315	1,561	1,535	1,513	1,484	
전체 교수 1인 당 발표(건)	3.53	4.40	5.00	9.74	8.92	11.10	12.75	12.43	10.66	
전체 교수 1인 당 발표(건)	4.46	5.47	5.71	10.97	10.34	11.52	13.50	13.60	12.83	

비고: 1. '특허'에서 1998년까지 신규 출원 건수의 정확한 집계는 없다.

2. '기타'는 중설, 연구 보고서, 지적 재산권, 전시 발표와 창작, 학술회의 초청 강연 등이다.

출전: 『대학 백서』, 각년판과 『통계연보』, 각년판에서 작성.

〈표 4-2-52〉 교수 단행본 출간 및 학술 논문 발표 상황(1988~2005년)

구분	교수 수(명)		단행본(권)					논문(편)				
	현원	자료 제출자	저서	역서	편저	계	교수 1인 당 평균	정기 학술지	학술회의 논문	기타	계	교수 1인 당 평균
연도												
1988	1,291	1,204	192	49	40	281	0.23	1,832	401	240	2,473	2.05
1990	1,320	1,061	260	39	35	334	0.31	2,197	503	332	3,032	2.85
1992	1,359	1,189	299	49	59	407	0.34	2,567	936	311	3,814	3.20
1994	1,408	1,204	392	78	151	621	0.60	4,168	1,447	682	6,327	5.25
1996	1,509	1,291	438	75	89	602	0.40	5,009	1,879	5,055	11,943	7.91
1998	1,603	1,457	536	69	83	688	0.42	5,919	3,020	5,554	14,493	9.04
2000	1,627	1,511	782	93	113	988	0.61	6,825	1,953	9,090	17,868	10.98
2002	1,656	1,513	674	56	102	832	0.50	6,642	2,755	9,814	19,211	11.60
2003	1,786	1,484	508	85	51	644	0.36	6,540	2,568	8,907	18,015	10.09
2004	1,860	1,585	499	91	68	658	0.35	7,543	2,885	10,413	20,841	11.20
2005	1,924	1,575	475	85	70	631	0.33	6,230	2,346	12,211	20,787	10.80

비고: 1. 교수 현원(기금 교수 포함)은 매년 4월 1일 기준, 연구 업적 발표 기간은 매년 1월 1일~12월 31일이다.

2. 논문의 '기타'는 연구 보고서, 지적 재산권, 전시 발표와 창작, 학술회의 초청 강연 등이다.

출전: 『통계연보』, 각년판에서 작성.

〈표 4-2-53〉 교수 해외논문 발표 상황(1988~1994년)

(단위: 편)

연도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총수	정기 학술지	총수	정기 학술지	총수	정기 학술지	총수	정기 학술지	총수	정기 학술지	총수	정기 학술지	총수	정기 학술지
계	345	195	452	269	499	304	639	353	748	463	1,006	547	1,350	827

출전: 『서울대학교 50년사』, 929쪽.

〈표 4-2-54〉 주요 단과대학(원) SCI(E) 논문 수(1999~2003년)

(단위: 편)

구분 \ 연도	1999	2000	2001	2002	2003
본교 전체	2,313	2,768	2,987	3,191	3,189
자연대	547	597	662	642	610
공대	738	785	781	899	804
의대	672	893	964	1,021	1,036
농생대	102	135	135	147	202
수의대	55	103	152	150	134
약대	164	172	178	188	243
치대	24	60	101	105	142
보건대학원	7	19	14	31	17
사회과학대학	9	7	9	7	1

출전: 『대학백서』, 각년판에서 작성.

표한 논문 수를 나타냈는데, 그 이전의 자료는 남아 있지 않다. 외국 학술지 발표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여 1988년 345편에서 1994년 1,350편을 기록하여 무려 3.9배나 증가했다. 외국 학술지 중 정기 학술지 발표 논문 수 역시 1988년 195편에서 1994년 827편으로 4.2배 증가했다.

1990년대 중반부터 본교는 교수 연구 업적의 주요 지표로 과학기술논문색인(SCI) 등 국제 인증 학술지(이하, SCI(E)) 논문 수를 집계했다. 〈표 4-2-54〉에서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주요 단과대학 SCI(E) 논문 수를 나타냈는데, 1998년 이전 시기의 통계는 오류가 많고 자료 간 편차가 커서 수록하지 않았다. 학문 특성상 SCI(E) 논문 발표 수는 과학 기술 분야의 단과대학(원)이 월등히 높다.

교수 연구 업적의 양적 증가는 대학 사회의 연구 활성화 정도를 가늠하는 지표이다.

수량적으로만 본다면 1980년대 전반까지 교수 연구 성과가 크게 증가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이후 본교가 연구 행정 지원 체제를 합리화하고, 연구비 수혜액이 증가하면서 교수 연구 업적이 크게 늘었다. 물론 질적 차원이나 역사적 성격 등을 고려한다면 문제는 조금 더 복잡해진다. 연구 여건의 정도가 시기마다 다르고, 학문의 발전 단계별로 중시되는 평가 준거가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970년대까지 교수 연구 업적으로 저서나 번역서가 중요했으나, 1990년대 이후에는 국내외 논문 출판이 중요했고, 2000년대 들어서는 국제 수준의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높은 평가를 받는 추세이다. 그러므로 교수 연구 업적의 수량적 평가만으로 본교 학문연구의 역사를 조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추후 보다 정밀하고 역사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대학 연구소는 대학의 3대 기능 중 연구와 봉사를 실천하는 기관이다. 대학은 연구소를 설립하여 학과(부)나 대학원에서 하기 어려운 학제간 연구나 목적지향성이 있고 사회적 수요가 큰 연구를 수행한다. 또 연구소는 학과(부)나 대학원보다 설립과 운영의 자율성이 크므로 연구 인력의 유동성이 높으며, 정부나 산업체와의 관계가 유연하다. 선진국 연구중심대학은 연구소를 통해 우수한 연구자를 경쟁적으로 흡수하고 정부·산업·지역의 대학 지원 확대를 꾀한다. 그러므로 대학 연구소는 대학 연구 역량 증대뿐만 아니라 대학의 수입 증가와 학문분야의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한다.

초창기부터 1980년대까지 본교 연구소는 연구 활동 여건이 매우 열악했다. 1946년 생약연구소 설립 이후 한동안 연구소 신설이 없다가 1960년대부터 다시 연구소 설립 수가 증가했으나, 연구소 운영비나 연구재원은 턱없이 모자란 상황이었다. 1980년대 말부터 본교가 연구중심대학 이상을 표방하면서 다시 연구소 수가 급격히 늘고 조직과 규모도 상당히 팽창했다. 특히 산학협동연구를 수행하는 공학계열 공동연구소 설립이 많았고 이들 신설 연구소를 중심으로 연구비가 급격히 늘었다. 더불어 1980년대 말부터 연구소 제도도 상당히 복잡하게 변했다. 본교는 연구소에 관련된 학칙과 규정을 수차례 개정하고 1990년대 중반에는 연구소 평가 제도를 도입하였다. 1절은 개교 이후부터 현재까지 연구소 설립과 변화 추이를 정리하고 2절은 연구소의 조직과 인력, 재원에 대한

수치적 변화를 집계했다.

아직까지 한국사회에서 대학 연구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실정이다. 대학 운영의 중심은 여전히 학과(부)와 대학원 위주이며 연구소를 단지 부속 시설로 취급하는 경향이 강하다. 본교의 연구소 관리 체제 역시 엄정하지 않고 연구소 관련 통계 또한 불완전하다. 본교가 국제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연구소의 전략적 운영과 활용을 모색해야 한다.

## 제 1 절 연구소(원)의 설립과 변화

### 1) 초창기 연구소 설립(1946~1974년)

1946년 8월 서울대학교 최초의 연구소인 생약연구소(현 천연물과학연구소)가 발족했다. 그러나 이후 약 15년 동안 생약연구소 이외에 추가로 설립된 연구소는 전혀 없었다. 본교는 1950년대 초 한국전쟁을 겪고 1950년대 중후반 전후 복구 사업에 몰두했기 때문에 연구소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웠다.

전후 복구를 완료하고 대학의 학문 연구가 정상화한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본교는 비로소 연구소 설립에 박차를 가했다. 1961년 한국경제연구소를 시작으로 1973년까지 연구소 23곳을 신설하였다. 이 중 열대농업연구소와 농업과학연구소를 1972년 농업과학연구소에 통합하면서 1973년 현재 생약연구소와 함께 전체 연구소는 총 23곳이다. 이 시기 연구소 설립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4-3-1>과 같다.

본교는 연구소를 설립 근거와 소속에 따라서 크게 법정 연구소와 비법정 연구소로 나누었다. 법정 연구소는 연구소의 설립과 운영을 1946년에 마련한 ‘국립서울대학교설립에관한법령’에 근거했다. 그러므로 법정 연구소를 설립하거나 비법정 연구소를 법정 연구소로 바꾸려면 설치령을 개정해야 했다. 법정 연구소는 다시 둘로 나누었는데 하나는 본교 직할 연구소이고, 다른 하나는 단과대학 부속 법정 연구소였다. 한편 비법정 연구소는 설치령에 관계없이 내부 규정에 따라 단과대학 부설로 설립할 수 있었다.

법정 연구소와 비법정 연구소는 설립 근거가 달랐고 재정 지원에도 차이가 있었다. 공식 기관인 법정 연구소는 예산 배정과 인력 배정을 받는 데 비하여 비법정 연구소는

〈표 4-3-1〉 연구소 설립 현황(1946~1973년)

(단위: 곳)

설립 연도	연구소	계
1946	생약연구소(천연물과학연구소)	1
1961	한국경제연구소(경제연구소), 동아문화연구소	2
1962	학생지도연구소(학생생활연구소 → 대학생생활연구소), 결핵연구소	2
1963	교육연구소, 어학연구소(언어교육원), 신문연구소(언론정보연구소), 한국경영연구소(경영연구소), 암연구소, 풍토병연구소	6
1964	한국법학연구소(법학연구소)	1
1965	응용과학연구소(생산기술연구소 → 공학연구소), 국민체력과학연구소	2
1966	인구문제연구소(인구 및 발전문제연구소 → 사회발전연구소), 국민보건연구소	2
1967	행정조사연구소(한국행정연구소), 열대농업연구소, 농업과학연구소 (단, 열대농업연구소와 농업과학연구소는 1972년에 농업과학연구소로 통합됨)	3
1969	한국문화연구소	1
1970	재외국민교육연구소(재외국민교육원)	1
1972	인구의학연구소(의학연구원), 국제문제연구소	2
1973	과학교육연구소	1
1973년 현재 연구소 총수: 23		

비고: 1. 괄호 안은 추후 바뀐 명칭이다.

2. 서울대학교설치령 중 개정령 대통령령 제8,460호(1977. 2. 28)에서 제6조 제1항 중 '재외국민교육연구소'를 삭제한 내용은 있다. 재외국민교육연구소는 1977년 '재외국민교육원'으로 승격하면서 본교 연구기관 소속에서 분리되어 별도의 기관으로 설립되었으므로 이하의 서술에서 제외했다.

출전: 『서울대학교 40년사』, 248-262쪽을 참조하고, 국립학교 설치령과 서울대학교 설치령의 변화를 토대로 작성했다. 국립학교 설치령 및 서울대학교 설치령 중 연구소 관련 변화를 볼 수 있는 것으로 다음의 제정, 개정령을 참조했다.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 1961. 5. 4 국무령 254호」,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 1962. 5. 25 각령 제774호」, 「국립학교 설치령 전문개정 1969. 8. 11 대통령령 제4006호」, 「서울대학교 설치령 제정 1970. 4. 8 대통령령 제4870호」, 「서울대학교 설치령 일부개정 1970. 6. 23 대통령령 제5116호」, 「일부개정 1971. 6. 10 대통령령 제5666호」, 「서울대학교 설치령 일부개정 1973. 9. 29 대통령령 제6880호」.

공식적으로 지원받기가 어려웠다. 1970년대까지 외부에서 지원하는 연구비가 매우 부족해서 비법정 연구소들은 대부분 운영이 어려웠다. 물론 이 시기에 법정 연구소에 대한 지원 역시 넉넉한 것은 아니었지만, 비법정 연구소들은 적은 액수나마 지원을 받기 위해 꾸준히 법정화를 추진했다.

1974년까지 본교 연구소 23곳 중 법정 연구소는 8곳이었고, 나머지 연구소는 모두 비법정 연구소였다. 법정 연구소 가운데 본교 직할 법정 연구소는 모두 5곳이었으며,

생약연구소, 어학연구소, 학생지도연구소, 법학연구소, 재외국민연구소가 이에 해당했다. 단과대학 부속 법정 연구소로는 신문대학원의 신문연구소와 상과대학의 한국경제연구소, 사범대학의 과학교육연구소 3곳이 있었다.

본교 직할 법정 연구소 5곳을 제외한 단과대학 부속 법정 연구소와 부설 비법정 연구소를 소속 대학별로 살펴보면 문리과대학 4곳, 상과대학 2곳, 공과대학 1곳, 농과대학 1곳, 사범대학 2곳, 의과대학 5곳이었으며, 특수 대학원 부설 연구소가 보건대학원, 행정대학원, 신문대학원에 1곳씩 있었다. 문리과대학과 의과대학에 소속된 연구소가 다소 많기는 했지만 연구소 설립 수는 대학별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

## 2) 종합화 이후 연구소 제도 변화와 설립 양상(1975~1987년)

### (1) 캠퍼스 종합화에 따른 연구소의 변화

1975년 관악 캠퍼스로 이전, 종합화한 뒤 기존 연구소들은 상당히 변화했다. 먼저 종합화에 따라 문리과대학, 상과대학을 폐지하는 등 단과대학을 개편하자 연구소의 소속이 달라졌고 일부 연구소는 명칭을 바꾸었다. <표 4-3-2>에 종합화 이후 소속을 바꾼 연구소를 정리했다. 단과대학 기구 개편에 따라 3개의 단과대학으로 분리한 과거 문리과대학 소속 연구소의 변화가 가장 큰데, 예를 들어 동아문화연구소와 국제문제연구소는 종합화 이전에는 동일하게 문리과대학 소속이었으나, 종합화 이후 각각 인문대학 부

<표 4-3-2> 종합화 이후 연구소 소속 및 위상 변동

연구소	변동 상황
신문연구소	신문대학원 부속 법정(1968년) → 사회과학대학 부속(1975년) → 본교 직할(1982년)
동아문화연구소	문리과대학 부설 비법정(1963년) → 인문대학 부설(1975년)
인구 및 발전문제 연구소	문리과대학 부설 비법정(1965년) → 사회과학대학 부설(1975년)
한국문화연구소	문리과대학 부설 비법정(1969년) → 인문대학 부설(1975년) → 본교직할 법정(1979년)
한국경영연구소	상과대학 부설 비법정(1965년) → 경영대학 부설(1975년)
국제문제연구소	문리과대학 부설 비법정(1972년) → 사회과학대학 부설(1975년)
인구의학연구소	의과대학 부속 법정(1979년) → 본교 직할 법정(1982년)

출전: 『서울대학교 40년사』, 574쪽과 『서울대학교 연구소 요람, 1994』를 참조하여 작성.



〈표 4-3-3〉 종합화 이후 연구소 명칭 및 위상 변동

설립 연도	기존 명칭	변경 명칭	소속과 위상 변화
1962	학생지도연구소	학생생활연구소(1975년)	본교 직할
1961	한국경제연구소	경제연구소(1975년)	상과대학 부속 법정 → 본교 직할 법정
1965	한국경영연구소	경영연구소(1975년)	상과대학 부설 비법정 → 경영대학 부설
1961	비교법학연구소	한국법학연구소(1963년) → 법학연구소(1970년)	법과대학 부속 법정 → 본교 직할 법정
1965	응용과학연구소	생산기술연구소(1975년)	공과대학 부설 비법정 → 공과대학 부속 법정
1972	농업과학연구소	농업개발연구소(1975년)	농과대학 부설 비법정 → 농과대학 부속 법정(1981년)

출전: 『서울대학교 40년사』, 575쪽과 『서울대학교 연구소 요람, 1994』를 참조하여 작성.

설 연구소와 사회과학대학 부설 연구소로 분리했다.

연구소의 소속 변화와 함께 종합화 이후 한국문화연구소와 같이 단과대학 소속 비법정 연구소에서 본교 직할 법정 연구소로 승격하는 등의 질적인 변화도 있었다. 이밖에 본래 전력연구소(1963년)로 설립한 응용과학연구소(1965년)가 생산기술연구소(1976년)로 바뀌는 등 명칭이 바뀐 연구소도 6곳이나 되었다(〈표 4-3-3〉). 명칭은 캠퍼스 이동에 따른 소속 변화와 함께 각 연구소가 관심 영역을 확대하거나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바뀌었다.

## (2) 종합화 이후 연구소 설립 양상

본교는 종합화 이후부터 1987년까지 연구소를 지속적으로 설립했다. 1976년에 설립한 미국학연구소를 비롯하여 법정 연구소 9곳과 비법정 연구소 11곳, 도합 20곳의 연구소를 1976년부터 1987년까지 신설했다. 〈표 4-3-4〉에 신설 연구소를 정리했다.

1975년 종합화 이후 각종 연구소들을 설립한 배경은 매우 다양했다. 물론 1975년 이전과 마찬가지로 종합화 이후에도 연구소 설립 취지는 대부분 각 단과대학의 연구를 활성화하려는 데 있었다. 특히 부설 연구소가 없던 단과대학들이 활발하게 연구소를 설립했는데, 수의과대학의 수의과학연구소, 치과대학의 치학연구소, 환경대학원의 환경계획연구소, 미술대학의 조형연구소, 가정대학의 생활과학연구소, 약학대학의 종합약학연구소 등을 이 시기에 설립했다.

한편 종합화 이후 몇몇 연구소는 국가의 사회 정책이나 과학 기술 정책을 반영하여 설립했다는 특징이 있었다. 대표적인 예로 새마을운동종합연구소는 당시 정부가 시행하던 1970년대 새마을 운동과 관련이 깊었다. 이 연구소는 새마을 운동과 관련하여 개

〈표 4-3-4〉 연구소 설립 상황(1975년 종합화~1987년)

연구소	설립 연도	비고
미국학연구소	1976	법정, 본교 직할
사회과학연구소	1976	법정, 본교 직할
자연과학종합연구소	1976	비법정 → 법정, 자연과학대학 부속(1979년) → 본교 직할(1981년)
동양음악연구소	1976	비법정, 음악대학 부설
새마을운동종합연구소	1977	비법정 → 법정, 본교 직할(1979년)
체육연구소	1978	비법정, 사범대학 부설
인문과학연구소	1979	비법정 → 법정, 인문대학 부속(1981년)
간연구소	1980	비법정, 의과대학 부설
치학연구소	1980	비법정, 치과대학 부설
환경계획연구소	1980	비법정, 환경대학원 부설
종합약학연구소	1981	비법정, 약학대학 부설
환경안전관리소	1982	비법정 → 법정, 본교 직할(1984년, 환경안전연구소로 개칭)
수의과학연구소	1982	비법정, 수의과대학 부설
유전공학연구소	1984	법정, 본교 직할
반도체공동연구소	1985	법정, 본교 직할
조형연구소	1985	비법정, 미술대학 부설
생활과학연구소	1986	비법정, 가정대학 부설
한국정치연구소	1986	비법정, 사회과학대학 부설
해양연구소	1986	비법정, 자연과학대학 부설 → 법정, 자연과학대학 부속(1992년)
신경과학연구소	1987	비법정, 의과대학 부설

출전: 『서울대학교 40년사』, 576쪽과 『서울대학교 요람』, 각년판의 「기구표」를 참조하여 작성.

발 사업에 관심이 있는 국내외 교수, 학자, 전문가에게 교류의 장 역할을 했으며 1992년 해체 전까지 『서울대 새마을 운동 종합 연구』라는 학술지를 발간했다. 또 1983년 ‘유전 공학육성법’ 제정을 바탕으로 1984년 유전공학연구소를 신설했다. 유전공학육성법은 유전 공학 연구의 기반을 조성하여 유전 공학을 더 효율적으로 육성 발전시키고 개발 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1983년 12월 31일 법률 제3718호로 제정되었다. 이와 같이 종합화 이후부터 1980년대 말까지 신설한 연구소 중에는 국가의 정책 지향과 부합하는 기관이 뚜렷하게 존재했다.

1975년 이후 1987년까지 13년 동안 연구소 20곳을 신설했고, 법정 연구소도 19곳으로 증가하는 등 연구소는 양적, 질적으로 크게 변화하고 발전했다. 이는 종합화 이전의 연구소 23곳 중 법정 연구소는 8곳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상당한 발전이었다. 그러나

〈표 4-3-5〉 연구소 설치 상황(1987년)

본교 직할 법정 연구소(15곳)	단과대학 부속·부설 연구소			
	소속 단과대학	법정 연구소(4곳)	비법정 연구소(23곳)	
생약연구소 어학연구소 학생생활연구소 사회과학연구소 경제연구소 법학연구소 한국문화연구소 미국학연구소 새마을운동종합연구소 자연과학종합연구소 신문연구소 인구의학연구소 환경안전연구소 유전공학연구소 반도체공동연구소	인문대학	인문과학연구소	동아문화연구소	
	사회과학대학		인구 및 발전문제연구소 국제문제연구소 한국정치연구소	
	자연과학대학		해양연구소	
	가정대학		생활과학연구소	
	경영대학		경영연구소	
	공과대학	생산기술연구소		
	농과대학	농업개발연구소		
	미술대학		조형연구소	
	사범대학	과학교육연구소	교육연구소 체육연구소	
	수의과대학		수의과학연구소	
	약학대학		종합약학연구소	
	음악대학		동양음악연구소	
	의과대학			결핵연구소 암연구소 풍토병연구소 국민체력과학연구소 간연구소 신경과학연구소
		치과대학		치학연구소
		보건대학원		국민보건연구소
		행정대학원		행정조사연구소
		환경대학원		환경계획연구소

출전: 『서울대학교 요람, 1987~1988』, 17쪽 「기구조표」, 『서울대학교 요람, 1987~1988』 출간(1987년 9월) 이후에 설립한 신경과학연구소(1987년 11월 설립)를 보충하였다.

연구소의 이러한 양적 팽창이 그에 상응하는 연구의 활성화를 가져왔다고 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았다. 양적 팽창에 걸맞은 질적 지원이 뒤따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1980년대까지 연구소들은 대부분 전문 연구원뿐 아니라 연구에 필요한 경비나 운영 경비를

조달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었다. 또 일부 연구소는 필요한 공간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채 관련 교수의 개인 연구실에 간판을 걸어 명목만 유지했을 정도로 응색함을 면치 못했다. 1987년 현재 연구소의 분포 상황을 정리하면 앞의 <표 4-3-5>와 같다.

### 3) 연구소(원)의 급증과 통합(1988~2000년)

#### (1) 1980년대 말~2000년 연구소 신설 경향

1987년 총 42곳이던 본교 연구소는 약 7년 뒤인 1994년에 83곳으로 무려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그러다가 1990년대 중반 이후 연구소를 통합하면서 2000년에 72곳으로 감소했다. <표 4-3-6>은 연구소 간 통합과 이동, 위상 변동을 고려하여 집계한 연도별 연구소 현황이다. 연구소의 통합과 이동을 고려하더라도 1980년대 말부터 2000년까지 본교 연구소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표 4-3-7>에서 보듯, 연구소 간 통합과 이동을 고려하지 않고 살펴보면 1988년부터 1998년까지 본교에 연구소를 총 52곳 신설하였다. 주목할 만한 점은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까지 몇 년 간 연구소를 집중적으로 신설하였다는 사실이다. 즉, 1989년

<표 4-3-6> 연구소 현황 추이(1990~2000년)

(단위: 곳)

소속	위상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본부 직할	법정	15	15	19	19	19	19	20	22	22	22	22
	비법정	4	5	3	3	3	3	2	1	1	1	1
대학	법정	4	3	4	4	4	4	6	10	10	10	10
	비법정	43	47	53	55	57	57	50	36	40	39	39
계		66	70	79	81	83	83	78	69	73	72	72

출전: 『통계연보』, 각년판에서 작성. 참고로 『대학 백서 1998·1999』, 97쪽에 1999년의 연구소 총수가 83곳으로 나와 있으나, 이는 계산상의 오류이다. 『대학 백서 1998·1999』를 참고한 『대학신문』 기사들 역시 같은 오류가 있다.

<표 4-3-7> 연구소 설립 추이(1988~2000년)

(단위: 곳)

연도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신설 연구소 수	2	13	14	9	2	2	0	1	3	5	1	0	0

출전: 『통계연보』, 각년판에서 작성.

13곳, 1990년 14곳, 1991년 9곳을 신설하였다. 비교적 최근의 연구소 증가는 이 3년 동안의 신설 때문이다.

본교 연구소의 급증은 1980년대 후반부터 연구 중심 대학을 표방하고 1989년 3월 11일 ‘연구소규정’을 제정하여 연구소 설립을 장려한 데서 비롯하였다. 이 연구소 규정에 따르면 연구소는 기존의 교육·연구 조직이 담당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영역의 학문을 연구하거나 기존의 교육·연구 조직으로 받을 수 없는 지원을 유치해 본교의 학술 연구 진흥에 기여할 수 있을 때에 설치하도록 했다. 신설 연구소는 대학 또는 대학원 부설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며, 재정 지원이 확실하고 복수의 대학(원)과 관련한 연구 영역에 속하거나 교외 기관과 공동 연구소로 운영할 경우 본교 부설 연구소로 설치하게 했다. 또 연구소 신설은 연구위원회와 기획위원회, 학장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며, 비법정 부설 연구소의 경우에는 기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1988~1998년 신설한 연구소를 소속별로 정리하면 <표 4-3-8>과 같다. 1988~1998년 연구소 설립 양상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산학 협동 연구 활성화를 위해 본교 직할 공동 연구소를 설립한 일이었다. ‘서울대학교 부속 및 부설 공동연구소 운영지침’에

<표 4-3-8> 연구소 증설 상황(1988~1998년)

소속	연구소	설립 연도
본교 직할(7곳)	신소재공동연구소	1988
	자동화시스템공동연구소	1988
	지역종합연구센터	1989
	정밀기계설계공동연구소	1989
	컴퓨터신기술공동연구소	1989
	뉴미디어기술공동연구소	1991
	교육종합연구원	1997
	인문대학(10곳)	철학사상연구소
불어문화권연구소		1989
소련동구연구소		1989
스페인중남미연구소		1989
종교문제연구소		1989
영연방연구소		1990
독일학연구소		1990
예술문화연구소		1990
인지과학연구소		1997
인문정보연구소		1997

〈표 4-3-8〉 계속

소속	연구소	설립 연도
사회과학대학(5곳)	국토문제연구소	1990
	사회복지연구소	1990
	세계경제연구소	1990
	비교문화연구소	1990
	심리과학연구소	1991
자연과학대학(9곳)	통계연구소	1989
	수학연구소	1990
	이론물리학연구소	1990
	분자과학연구소	1990
	광물연구소	1990
	미생물연구소	1990
	물성과학연구소	1991
	대기환경연구소	1991
분자세포생물학연구소	1997	
간호대학(1곳)	간호과학연구소	1995
경영대학(3곳)	노사관계연구소	1989
	경영정보연구소	1989
	증권금융연구소	1991
공과대학(5곳)	에너지자원신기술연구소	1991
	해양시스템공학연구소	1993
	화학공정신기술연구소	1996
	초미세소자기술연구소	1996
	항공우주신기술연구소	1998
농업생명과학대학(4곳)	임업과학연구소	1991
	축산과학기술연구소	1991
	농업생물신소재연구소	1996
	북한농업연구소	1997
사범대학(2곳)	사회교육연구소	1990
	국어교육연구소	1992
음악대학(2곳)	서양음악연구소	1989
	오페라연구소	1993
의과대학(3곳)	의공학연구소	1989
	환경의학연구소	1990
	심장연구소	1991
행정대학원(1곳)	정보통신행정연구소	1992

출전: 『서울대학교 요람』, 각년판의 「기구표」와 『통계연보』, 각년판에서 작성.

따르면 공동 연구소는 국가적 필요에 따라 국가 기관, 공익 단체, 민간 단체가 설립을 요청하고 지원을 보장할 때 설치할 수 있었다. 공동 연구소는 본교 예산에서 분리한 독립 예산 계정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며, 외곽 시설과 내부 설비·확보 유지에 소요하는 제반 경비를 정부 부처나 산업체 등 유관 기관의 보조금과 수탁 연구비 등으로 충당하도록 했다. 또 공동 연구소를 법정화하고자 할 때에는 외부 지원 실적, 연구 실적, 연구소 운영 실적, 기금 적립 실적, 향후 전망 등을 평가해서 결정하도록 했다.

본교는 1985년 공동 연구소의 '원조' 격으로 설립한 반도체공동연구소를 비롯하여 1988년 신소재공동연구소와 자동화시스템공동연구소, 1989년 정밀기계설계공동연구소와 컴퓨터신기술공동연구소, 1991년 뉴미디어통신공동연구소 등 6곳을 공동 연구소로 설립했다. 이 연구소들은 정부나 산업체의 지원을 받아 국가 경쟁력 강화와 21세기 첨단 산업 기술 개발을 위한 핵심 기반 기술을 연구하고 해당 분야의 고급 인력을 양성하여 배출하는 한편, 산업체 관계자들을 계속 교육시켜 산업체가 연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공동 연구소들은 정부의 관련 부서나 기업체에서 거액의 지원금을 받아 전용 연구동과 고가의 첨단 기자재를 갖추고 대학 간 공동 연구나 산학 협동 연구를 하여 산·학·관·연 협력 체제를 구축했다.

공학 계열 공동 연구소의 용역 연구비 수주 실적을 살펴보면 <표 4-3-9>와 같이 공동 연구소 6곳의 연구비가 본교 법정 연구소 전체의 용역 연구비 절반가량을 차지할 만큼 집중적으로 지원받았음을 알 수 있다. 공학 계열 공동 연구소에 연구비 지원을 집중한 현상은 비교적 최근까지 이어졌다. 2004년 연구소 연구비 수혜 총액이 1,135억 3,265만 8천 원이었는데, 이 중 공동 연구소 6곳의 연구비 수혜액이 441억 1,777만 7천 원으로 전체의 약 40%를 차지했다.

1988~1998년 연구소 설립 양상의 두 번째 특징은 1989년 지역 연구 활성화를 위해 지역종합연구센터(1992년 지역종합연구소로 개칭)를 설립했다는 점이다. 지역종합연구센터는 국제 관계에 대한 종합적인 학술 연구의 필요에 따라 그리고 국제 교류 증대에 따른 정부와 민간 단체에 대한 정책 자문을 위해서 설립하였다. 정부는 이 연구소에 연구동 설립, 자료실 확충, 연구비 등을 전폭 지원했다. <표 4-3-10>에서 보듯 1990년대 초반 지역종합연구소의 용역 연구비 수혜 실적은 그 외 인문·사회 과학 계열 연구소들의 연구비보다 훨씬 컸다.

지역종합연구소에 대한 집중 투자는 한편으로 1980년대 연구비가 이공 계열 학문에 지나치게 편중하는 경향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했다. 침체된 인문·사회계 연구비

〈표 4-3-9〉 공학 계열 공동연구소 용역연구비 수혜 현황(1988~1998년)

(단위: 천 원)

연도	구분	용역 연구비							서울대 법정 연구소 전체
		반도체 공동 연구소	신소재 공동 연구소	자동화 시스템 공동 연구소	정밀기계 설계 공동 연구소	컴퓨터 신기술 공동연구소	뉴미디어 통신 공동 연구소	소계	
1988		780,365	397,172	901,483	-	465,733	-	2,544,753	10,220,479
1989		1,126,882	697,874	1,726,549	89,174	2,595,176	-	6,235,655	13,520,772
1990		886,911	904,929	1,613,870	1,401,958	1,193,078	208,789	6,209,535	13,167,974
1991		1,474,069	1,455,792	1,321,813	2,663,738	1,909,987	297,642	9,123,041	16,645,878
1992		1,351,340	2,825,041	503,836	2,217,788	2,708,104	237,342	9,843,451	17,386,998
1993		1,644,764	4,204,746	2,393,223	3,919,989	2,053,031	502,689	14,718,442	22,490,863
1994		4,185,617	667,347	2,231,878	4,935,974	5,561,096	408,891	17,990,803	32,696,901
1995		4,985,230	3,497,722	1,899,271	7,150,992	628,500	1,965,551	20,127,266	37,739,653
1996		5,891,083	3,257,974	2,504,831	7,385,405	4,679,214	2,002,909	25,721,416	46,804,653
1997		6,381,698	3,936,114	2,115,636	7,584,584	6,679,428	2,809,935	29,507,395	51,661,349
1998		4,794,890	4,567,200	1,926,912	5,287,498	2,339,919	2,105,884	21,022,303	39,439,517

출전: 『통계연보』, 각년판에서 작성.

〈표 4-3-10〉 인문사회과학 분야 주요 분교직할연구소 용역연구비 수혜 현황(1990~1996년)

(단위: 천 원)

연도	구분	용역 연구비						
		사회과학연구소	경제연구소	법학연구소	한국문화연구소	미국학연구소	인문학연구소	지역종합연구소
1990		76,000	172,500	10,000	100,000	12,000	12,000	250,000
1991		246,500	146,300	-	100,000	500	10,000	235,000
1992		24,000	120,705	-	170,100	-	10,000	235,000
1993		53,000	282,719	319,000	260,700	-	30,000	251,260
1994		381,000	347,560	30,000	205,600	11,200	39,700	314,360
1995		256,500	338,979	44,300	163,600	71,000	27,500	655,957
1996		1,263,315	189,832	39,000	306,397	71,250	81,200	258,926

출전: 『통계연보』, 각년판에서 작성.

지원이 지역 연구를 전환점으로 많아지기 시작했고, 이로써 본교는 어느 정도 학문 간 균형을 꾀할 수 있었다. 또한 지역종합연구소는 정부와 기업이 학계에 지역 연구 프로젝트를 의뢰하는 형태로 연구를 추진해 인문학 및 사회 과학 분야에서 산·학·관 협동 연구의 모델이 되었다. 지역종합연구소는 이러한 전폭적 지원에 힘입어 1997년 국제지역원, 2002년 국제대학원으로 발전했다.



한편 인문대학 부설 연구소로 1989년 불어문화권연구소와 러시아연구소, 스페인중남미연구소, 1990년 영연방연구소와 독일학연구소를 설립하였다. 이 연구소들은 기존 동아문화연구소와 함께 어학, 문학, 역사, 철학 등 인문 과학 분야와 정치, 경제, 사회, 법학, 민속학 등 사회 과학 분야에 대한 다각적이고 유기적인 학제 간 공동 연구 풍토를 마련했다. 이 연구소들은 점차 다변화되는 국제 관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제 사회의 지역별 또는 권역별 특성을 파악하여 학문적 발전은 물론 해당 지역과의 관계 확대와 국제 관계의 위상 정립에도 기여했다.

1988~1998년 연구소 설립 양상의 세 번째 특징은 단과대학 부설 연구소가 급증했다는 사실이다. 부설 연구소가 동아문화연구소 1곳이던 인문대학은 1989년 철학사상연구소 설립 이후 1997년까지 무려 10곳의 연구소를 신설했다. 사회과학대학은 연구소 5곳, 자연과학대학은 9곳을 이 시기에 신설했으며, 공과대학과 농업생명과학대학은 각각 연구소 5곳과 4곳을 신설했다. 의과대학과 경영대학도 각각 연구소 3곳을 신설했고, 음악대학과 가정대학은 각각 2곳, 간호대학과 행정대학원은 각각 1곳을 신설했다.

연구소는 학문 영역을 세분화하고 전문화하거나 사회적으로 필요할 때 설립한다. 학과는 교육 기능에 좀 더 치중하지만 연구소는 학과의 울타리를 넘어 학제 간 공동 연구를 하고 산학 협동 연구 등을 통해 국가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관이다. 1990년대 본교의 각 단과대학은 부설 연구소를 설립하여 용역 연구의 증대와 연구 활동의 활성화를 꾀했다. 그러나 연구소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1990년 전후 몇 년 동안 연구 인력, 연구 시설과 기자재, 연구비 등 연구 활동의 기본 자원이 분산되어 각 연구소들이 제 기능을 하기 어려웠다. 더욱이 연구소가 계속 증가하면서 연구소들의 연구 영역이 서로 중복되거나 1개 학과가 여러 연구소에 관여하는 경우, 그리고 기존 학과와 차이가 없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또한 연구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충분히 고려치 않고 연구소를 연구비 유치나 교수 요원 확충을 위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결국 연구소의 급격한 증설은 본교 연구소 전체의 혼란과 부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다. 따라서 연구소 증설이 주춤한 1990년대 중반부터 연구소 통합 등의 구조 조정을 실시하여 연구소를 내실화했다.

## (2) 1990년대 중후반 연구소(원)의 제도 변화와 내실화

1990년대 중후반 본교 연구소는 여러 차례 제도가 바뀌었다. 우선 1988년 이후 신설한 일부 연구소가 법정화를 통해 연구소의 위상을 높였다. 위상의 차이와 그에 따른 재

원과 인력 배정의 차이는 1990년대 비법정 연구소들이 법정화를 추진하는 동기가 되었다. <표 4-3-11>에 1989~1997년 법정화 등을 통해 지위가 승격된 연구소를 정리했다.

1989~1997년 연구소가 승격한 경우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첫째 단과대학 부속 법정 연구소가 본교 직할 법정 연구소로 승격한 경우, 둘째 본교 직할 비법정 연구소가 법정화한 경우, 셋째 단과대학 부설 비법정 연구소가 법정화한 경우이다. 공과대학 부속 법정 연구소이던 생산기술연구소는 1989년 본교 직할 법정 연구소로 소속을 바꾸면서 아예 공학연구소로 명칭을 바꾸었다. 인문대학 부속 법정 연구소이던 인문과학연구소도 1992년에 본교 직할 법정 연구소로 소속을 변경했다. 또한 1980년대 후반 본교 직할 비법정 연구소로 설립한 신소재공동연구소와 자동화시스템공동연구소는 정부와 기업체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급성장하여 1992년 법정화하였고, 정밀기계설계공동연구소와 컴퓨터신기술공동연구소도 1996년 법정화하였다. 인문 사회 계열 연구소로는 드물게 정부의 대규모 지원을 받은 지역종합연구센터 역시 1992년 법정화 직후 명칭을 지역종합연구소로 바꾸었다. 한편 단과대학 부설 비법정 연구소 가운데 탄탄한 연구소 운영과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한 해양연구소와 경영연구소가 1992년에, 암연구소와 간연

<표 4-3-11> 연구소 승격 상황(1989~1997년)

연구소	승격 연도	비고
공학연구소	1989	공과대학 부속 법정 → 본교직할 법정
인문과학연구소	1992	인문대학 부속 법정 → 본교직할 법정
신소재공동연구소	1992	본교직할 비법정 → 본교직할 법정
자동화시스템공동연구소	1992	본교직할 비법정 → 본교직할 법정
지역종합연구소	1992	본교직할 비법정 → 본교직할 법정
해양연구소	1992	자연과학대학 부설 비법정 → 자연과학대학 부속 법정
경영연구소	1992	경영대학 부설 비법정 → 경영대학 부속 법정
암연구소	1996	의과대학 부설 비법정 → 의과대학 부속 법정
간연구소	1996	의과대학 부설 비법정 → 의과대학 부속 법정
정밀기계설계공동연구소	1996	본교직할 비법정 → 본교직할 법정
컴퓨터신기술공동연구소	1996	본교직할 비법정 → 본교직할 법정
이론물리학연구소	1997	자연과학대학 부설 비법정 → 자연과학대학 부속 법정
미생물연구소	1997	자연과학대학 부설 비법정 → 자연과학대학 부속 법정
종합약학연구소	1997	약학대학 부설 비법정 → 약학대학 부속 법정
치학연구소	1997	치과대학 부설 비법정 → 치과대학 부속 법정
환경계획연구소	1997	환경대학원 부설 비법정 → 환경대학원 부속 법정

출전: 『통계연보』, 각년판에서 작성.

연구소가 1996년에 법정화했다. 다음 해인 1997년 이론물리학연구소, 미생물연구소, 종합약학연구소, 치학연구소, 환경계획연구소가 각각 법정화하여 해당 단과대학(대학원)의 핵심 연구소로 부상했다. 또 학문 자체의 발전과 사회적 필요에 따라 연구 분야를 확대하거나 세분화하여 연구 영역을 새롭게 정립해 연구소 명칭을 바꾼 경우도 많았다. <표 4-3-12>에 1989~1997년 연구소 명칭을 변경한 상황을 정리했다.

앞에서 보았듯이 1990년을 전후하여 본교 연구소는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단과대학 부설 비법정 연구소가 급증했는데, 이는 연구소 명칭이 있어야 연구비를 지원받기 용이한 당시 상황 때문이다. 그러나 연구소가 급격히 증가하자 연구가 중복되고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학내 의견이 높아지면서 1990년대 중반 연구소를 통폐합해야 할 필요가 커졌다. 1994년부터 시행한 연구소 평가 제도는 연구소의 조직과 운영, 연구 여건, 연구소의 활동 등을 매년 평가하여 유사 연구소들을 통폐합할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

또한 1996년 11월 13일 본교는 ‘서울대학교연구소설치에관한규정’(종래 명칭: ‘서울대학교부속및부설연구소설치에관한규정’)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연구소의 난립을 막고 통폐합을 유도할 제도를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시설 공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 조달 등 자립 능력이 있어야 설치할 수 있게 신설 연구소의 설립 요건을 강화했다. 그리고 신설 연구소를 한시적으로 허가하고 일정 기간 운영 후 이를 평가하여 실적이 저조

<표 4-3-12> 연구소 명칭 변경 상황(1989~1997년)

기존 명칭	변경 명칭
생산기술연구소	공학연구소(1989년)
행정조사연구소	한국행정연구소(1990년)
뉴미디어기술공동연구소	뉴미디어통신공동연구소(1991년)
생약연구소	천연물과학연구소(1992년)
지역연구종합센터	지역종합연구소(1992년)
소련동구연구소	러시아연구소(1993년)
신문연구소	언론정보연구소(1994년)
인구의학연구소	의학연구원(1994년)
인문과학연구소	인문학연구소(1994년)
영연방연구소	영문화권연구소(1995년)
인구및발전문제연구소	사회발전연구소(1995년)
지역종합연구소	국제지역원(1997년)

출전: 『통계연보』, 각년판에서 작성.

할 경우 폐쇄하도록 했다. 또 기존 연구소도 매년 연구 실적을 평가하여 연구소를 통폐합할 근거를 마련했다.

1990년대 중반 본교는 통합 연구원을 설립하여 난립하는 연구소들을 통폐합하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연구소 운영을 도모했다. 통합 연구원의 시초는 1995년 의과대학 내 연구소 8곳을 통합하여 설립한 의학연구원이다. 이후 1997년 사회과학대학 내 연구소 5곳을 통합한 사회과학연구원, 자연과학대학 내 연구소 6곳을 통합한 기초과학연구원, 사범대학 내 연구소 4곳을 통합한 교육종합연구원을 설립했다. 통합 연구원의 설립으로 최대 83곳이던 연구소 수는 2000년 현재 모두 72곳으로 감소하여 연구소를 내실화했다(〈표 4-3-13〉).

2000년 현재 본교 연구소는 본교 직할 법정 연구소 22곳, 본교 직할 비법정 연구소 1곳, 단과대학 부속 법정 연구소 10곳, 단과대학 부설 비법정 연구소 39곳이다. 또한 이 연구소들을 학문 분야별로 나누어 보면 인문·사회계 연구소가 31곳, 이공계 연구소가 36곳, 예체능계 연구소가 5곳이다. 특히 본교 직할 법정 연구소의 경우 인문·사회계와 이공계가 똑같이 11곳이다. 적어도 연구소 수만 따져 본다면 본교가 균형 있는 학문 발전을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4-3-14〉).

〈표 4-3-13〉 연구소 통합 상황(1995~1999년)

변동 연도	통합 전		통합 후
1995	인구의학연구소 풍토병연구소 결핵연구소 국민체력과학연구소	신경과학연구소 의공학연구소 환경의학연구소 심장연구소	의학연구원
1997	사회과학연구소 세계경제연구소 사회발전연구소	비교문화연구소 사회복지연구소	사회과학연구원
1999	한국정치연구소	국토문제연구소	
1997	자연과학종합연구소 통계연구소 대기환경연구소	분자과학연구소 물성과학연구소 광물연구소	기초과학연구원
1997	국어교육연구소 과학교육연구소	사회교육연구소 외국어교육연구소(신설)	교육종합연구원

출전: 『통계연보』, 각년판과 『대학신문』, 각년판 기사 참조.

〈표 4-3-14〉 연구소 설치 현황 (2000년 현재)

구분	위상	연구소		
본부 직할 (23곳)	법정(22곳)	천연물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원 한국문화연구소 언론정보연구소 유전공학연구소 인문학연구소 국제지역원 교육종합연구원	어학연구소 경제연구원 미국학연구소 의학연구원 반도체공동연구소 신소재공동연구소 정밀기계설계공동연구소	학생생활연구소 법학연구소 기초과학연구원 환경안전연구소 공학연구소 자동차시스템공동연구소 컴퓨터신기술공동연구소
	비법정(1곳)	뉴미디어통신공동연구소		
대학 부설 (49곳)	법정(10곳)	해양연구소 경영연구소 암연구소 환경계획연구소	이론물리학연구소 농업개발연구소 간연구소	미생물연구소 종합약학연구소 치학연구소
	비법정(39곳)	동아문화연구소 독일학연구소 철학사상연구소 인지과학연구소 심리과학연구소 간호과학연구소 증권·금융연구소 화학공정신기술연구소 임업과학연구소 축산과학기술연구소 체육연구소 동양음악연구소 국민보건연구소	영문화권연구소 러시아연구소 종교문제연구소 인문정보연구소 수학연구소 노사관계연구소 에너지자원신기술연구소 항공우주신기술연구소 농업생물신소재연구소 조형연구소 생활과학연구소 서양음악연구소 한국행정연구소	불어문화권연구소 스페인중남미연구소 예술문화연구소 국제문제연구소 분자세포생물학연구소 경영정보연구소 해양시스템공학연구소 초미세소자기술연구소 북한농업연구소 교육연구소 수의과학연구소 오페라연구소 정보통신행정연구소

출전: 『통계연보, 2000』, 49쪽.

## 4) 최근 연구소(원)의 제도 변화(2001~2006년)

본교 연구소(원) 제도는 2001년 서울대학교설치령과 학칙 개정으로 크게 변했다. 2001년 3월 1일 서울대학교설치령 개정으로 연구소 설립에 관한 사항을 학교에 대폭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학교가 학칙에 따라 연구소를 자율적으로 설치할 근거를 마련했다. 또 개정된 설치령은 학교가 자체적으로 연구소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2년마다 실적을 평가해 연구소의 존폐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동년 11월 21일 '서울대학교연구소설치에관한규정'을 확정하여 단과대학(원) 부속 연구소와 본부 부속 연구소 구분을 없앴다. 대신 주관 대학(원)을 정하여 시설과 공간의 사용, 업무와 관련된 사항 등을 주관 대학(원)의 장과 협의하도록 했다.

설치령과 규정이 바뀌자 2001년 이후 본교 연구소는 여러 제도 변화를 겪었다. 우선 연구소 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 시설로 분류해 오던 기관 중 일부를 본부 직할 부속 시설로 바꾸었다. 이미 1990년대 중반부터 연구소를 평가하여 일부 연구소들이 가장 중요한 평가 항목인 연구 실적 부문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한 점을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 어학연구소는 1996년 연구소 평가에서 조직과 연구 시설, 사회봉사 등의 항목에서 가장 우수한 점수를 받았으나 연구 실적 부문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어학연구소는 순수 연구 기관이라기보다 어학 교육 훈련과 언어 능력 측정에 중심을 두는 기관이기 때문에 연구소로 분류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 밖에도 어학연구소처럼 기관의 목적과 기능, 명칭이 연구 시설로 분류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학생생활연구소, 국제지역원, 환경안전연구소는 소속을 2001년과 2002년 본부 직할 부속 시설로 변경했다.

기존의 연구 시설 분류 기준인 법정 연구소와 비법정 연구소, 본부 직할 연구소와 대학 부설 연구소 구분을 없애고, 주관 대학(원)에 따른 분류로 일원화함으로써 본부 직할

〈표 4-3-15〉 연구소 지위 변경(연구소에서 제외)

변경 전 명칭	변경 후 명칭	비고
어학연구소	언어교육원	2001년 본부 직할 부속 시설
학생생활연구소	대학생활연구소	2001년 본부 직할 부속 시설
국제지역원	국제대학원	2001년 본부 직할 부속 시설 → 2003년 전문대학원인 국제대학원으로 확대·개편
환경안전연구소	환경안전원	2002년 본부 직할 부속 시설

출전: 『통계연보』, 각년판과 『대학백서』, 각년판, 「기구표」에서 작성.

연구소를 모두 단과대학(원) 소속으로 변경했다. 예를 들어 2000년까지 본부 직할 법정 연구소이던 사회과학연구원과 경제연구소를 2001년 주관 대학인 사회과학대학 소속으로 변경했다. <표 4-3-16>에 2000년에 본부 직할이던 연구소들을 2001년 설치령과 규정 개정에 따라 주관 대학(원) 소속으로 변경한 상황을 정리했다. 또 일부 연구소들은 연구소 분류 체계와 소속이 변하면서 명칭을 변경했다(<표 4-3-17>).

한편 <표 4-3-18>에서 보듯 이 시기에도 몇몇 연구소를 통폐합했는데, 2001년 인문학 분야의 연구소들과 농업 생명 과학 분야의 연구소들을 각각 인문학연구원과 농업생명과학연구원으로 통합했다. 이에 본교는 기존의 의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교육종합연구원과 함께 통합 연구원 6곳을 갖추었다.

연구소 통합으로 본교 연구소(원)는 2001년 60곳으로 감소했다. 1990년대 중반 최고

<표 4-3-16> 본부직할연구소의 주관 대학 변경 상황(2001년)

2000년도 본부 직할 연구소	주관 대학(원)	비고
사회과학연구원, 경제연구소, 언론정보연구소	사회대학	
법학연구소	법과대학	
인문학연구소, 한국문화연구소, 미국학연구소	인문대학	
기초과학연구원, 유전공학연구소	자연대학	
의학연구원	의과대학	
반도체공동연구소, 공학연구소, 신소재공동연구소, 자동화시스템공동연구소, 환경안전연구소, 정밀기계설계공동연구소, 컴퓨터신기술공동연구소, 뉴미디어통신공동연구소	공과대학	
교육종합연구원	사범대학	
천연물과학연구소	기타	2002년 약학대학으로 주관 대학 변경

출전: 『통계연보, 2001』, 47쪽에서 작성.

<표 4-3-17> 연구소 명칭 변경 상황 (2001년 이후)

주관 대학(원)	변경 연도	변경 전 명칭	변경 후 명칭
인문대학	2001	인문학연구소	인문학연구원
공과대학	2002	컴퓨터신기술공동연구소	컴퓨터연구소
사범대학	2002	체육연구소	스포츠과학연구소
보건대학원	2001	국민보건연구소	보건환경연구소

출전: 『서울대학교 소식지』, 각년판에서 작성.

〈표 4-3-18〉 연구소 통폐합 상황(2001년 이후)

변동 연도	통합 전	통합 후	비고
2001	동아문화연구소 영문화권연구소 불어문화권연구소 독일학연구소 러시아연구소 스페인중남미연구소 종교문제연구소 예술문화연구소 인문정보연구소	인문학연구원	하부 주요 부서로 통합
2001	농업개발연구소	농업생명과학연구원	연구소 3곳으로 세분화, 하부 주요 부서로 통합
2001	임업과학연구소 축산과학기술연구소 북한농업연구소	농업생명과학연구원	하부 주요 부서로 통합
2001	분자세포생물학연구소	기초과학연구원	하부 주요 부서로 통합
2003	조미세소자기술연구소		폐지

출전: 『서울대학교 소식지』, 각년판에서 작성.

〈표 4-3-19〉 연구소 현황 추이(2000~2005년)

(단위: 곳)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연구소 총수	73	60	60	61	62	64

출전: 『통계연보』, 각년판에서 작성.

83곳에 달했던 것에 비한다면, 통폐합은 연구소(원) 수를 규제하는 효과를 발휘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4-3-19〉에서 보듯 2001년 이후 2005년 현재까지 연구소 수는 그다지 변하지 않았다.

연구소(원) 수는 대체로 큰 변화가 없었으나, 2001년 이후에도 몇몇 연구소를 신설하였다. 그 주요한 흐름을 살펴보면, 우선 통합 연구원에 소속한 연구소들이 분리 독립했다. 2001년 사회과학연구원 산하에 있던 사회발전연구소와 국토문제연구소가 분리, 독립했으며, 교육종합연구원 산하에 있던 국어교육연구소도 분리, 독립했다. 두 번째로 학제 간 연구를 위한 연구소(원)를 활발하게 설립하였다. 2001년 이후 교내 연구소가 모



〈표 4-3-20〉 연구소 신설 상황(2001~2004년)

소속	신설 연도	연구소	비고
사회과학대학	2001	사회발전연구소 국토문제연구소	사회과학연구원에서 재분리
	2001	여성연구소	
사범대학	2001	국어교육연구소	교육종합연구원에서 분리
자연과학대학	2003	생명공학공동연구원	
인문대학	2003	역사연구소	
국제대학원	2003	국제학연구소	
	2004	일본연구소	
공과대학	2004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2004	건설환경종합연구소	

두 단과대학에 속하여 실질적으로 학제 간 연구를 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2000년대에 신설한 연구소들은 비록 주관 대학(원)에 속했지만, 그 근본 설립 동기와 취지가 학제 간 연구를 적극적으로 표방한다는 점이 이전 연구소(원)와 달랐다. 대표적인 예로 이공학 분야의 생명공학공동연구원과 인문·사회 분야의 역사연구소를 들 수 있다(〈표 4-3-20〉).

생명공학공동연구원은 본교에서 2001년부터 추진한 Bio Max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03년 국내 최대 규모로 설립하였다. 이 연구원의 설립을 위해 무려 7개 단과대학(공과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수의과대학, 약학대학, 의과대학, 자연과학대학, 치과대학)이 공동으로 설치안을 본부에 제출했고, 출범 당시 사범대학, 생활과학대학, 간호대학 등 3개의 단과대학이 더해져 총 10개의 단과대학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생명공학공동연구원은 기존의 학제 간 장벽을 넘어 생명 공학이라는 신생 학문의 다학제적 연구를 가속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2003년 9월 개소한 역사연구소 역시 인문학 및 사회 과학 분야에서 학제 간 연구의 필요성을 반영하는 기관으로 출범했다. 분야를 막론하고 역사학에 종사하는 교수 46명이 2002년 공동으로 역사연구소 설립안을 본부에 신청했고, 이 설립안을 2003년에 통과시켰다. 이 연구소는 국제사와 비교사 연구를 촉진하는 등 학제 연구의 활성화를 주요 목표로 삼았다.

그 외 각 통합 연구원 산하에 전문 연구의 필요에 따라 연구소를 활발하게 신설했다. 〈표 4-3-21〉에서 보듯 2001년 연구소 9곳을 통합한 인문학연구원은 2006년 현재 산하 연구소가 13곳으로, 1995년 연구소 8곳을 통합한 의학연구원은 산하 연구소가 무려 17

〈표 4-3-21〉 통합연구원 산하 소속연구소 현황(2006년)

통합 연구원	소속 연구소
인문학연구원	동아문화연구소, 영문화권연구소, 불어문화권연구소, 독일어문화권연구소, 러시아연구소, 스페인중남미연구소, 종교문제연구소, 예술문화연구소, 인문정보연구소, 한국문학연구소, 중국어문학연구소, 언어연구소, 문화유산연구소 (총 13곳)
의학연구원	인구의학연구소, 감염병연구소, 폐연구소, 체력과학노화연구소, 신경과학연구소, 의용생체 공학연구소, 환경의학연구소, 심장연구소, 내분비대사영양연구소, 방사선의학연구소, 유전자이식연구소, 장기이식연구소, 원자력영향·역학연구소, 인간행동의학연구소, 류마티스연구소, 피부과학연구소, 알레르기 및 임상면역연구소 (총 17곳)
사회과학연구원	비교문화연구소, 사회복지연구소, 세계경제연구소, 한국정치연구소, 중국연구소 (총 5곳)
기초과학연구원	통계연구소, 물성과학연구소, 분자과학연구소, 대기환경연구소, 지질환경연구소, 분자세포생물학연구소 (총 6곳)
농업생명과학연구원	농업생산·가공기술연구소, 식물환경과학연구소, 입업과학연구소, 축산과학기술연구소, 북한·해외농업연구소, 지역개발·조경연구소, 농생명과학정보연구소 (총 7곳)
교육종합연구원	외국어교육연구소, 사회교육연구소, 과학교육연구소 (총 3곳)

곳으로 증가했다.

본교는 2006년 2월 규장각과 한국문화연구소를 ‘규장각한국학연구원’으로 통합했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설립으로 기존 규장각과 한국문화연구소가 가지고 있던 조직과 기능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규장각 소장 자료의 보존 관리, 이를 바탕으로 한 연구, 출판, 교육, 보급 등의 사업을 더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그런데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대학 기구 분류상 본부 직할 부속시설이다. 기존 규장각을 부속시설로 분류했기 때문에 새로 발족한 규장각한국학연구원도 부속시설에 포함하였다. 따라서 2005년까지 연구시설이던 한국문화연구소를 2006년 이후 연구시설 목록에서 제외했다.

또한 2006년 4월 통일 연구를 담당하던 ‘통일학연구사업운영위원회’(약칭 통일학위원회)와 ‘통일포럼’을 통합하여 ‘통일연구소’를 설립했다. 통일연구소는 한반도 정세와 남북 관계, 주변 4강 관계 등에 관한 현실적 문제와 장기 과제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본교 외부 연구자들과도 활발히 교류하여 학제 간 통합 연구와 통일 후 발생할 각종 사회 문제의 실질 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본교는 통일연구소 출범시 학

〈표 4-3-22〉 연구소 설치 현황(2006년 8월 현재)

주관 기관	연구 시설(총 65곳)	계
본부	통일연구소	1
인문대학	인문학연구원, 미국학연구소, 인지과학연구소, 철학사상연구소, 역사연구소	5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연구원, 경제연구소, 언론정보연구소, 국제문제연구소, 심리과학연구소, 사회발전연구소, 국토문제연구소, 여성연구소	8
자연과학대학	기초과학연구원, 유전공학연구소, 해양연구소, 이론물리학연구소, 미생물연구소, 수학연구소, 생명공학공동연구원	7
간호대학	간호과학연구소	1
경영대학	경영연구소, 노사관계연구소, 경영정보연구소, 증권·금융연구소	4
공과대학	반도체공동연구소, 공학연구소, 신소재공동연구소, 자동화시스템공동연구소, 컴퓨터연구소, 정밀기계설계공동연구소, 뉴미디어통신공동연구소, 에너지자원신기술연구소, 해양시스템공학연구소, 화학공정신기술연구소, 항공우주신기술연구소,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13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업생명과학연구원, 농업생물신소재연구소	2
미술대학	조형연구소	1
법과대학	법학연구소	1
사범대학	교육종합연구원, 교육연구소, 스포츠과학연구소, 국어교육연구소	4
생활과학대학	생활과학연구소	1
수의과대학	수의과학연구소	1
약학대학	천연물과학연구소, 종합약학연구소	2
음악대학	동양음악연구소, 서양음악연구소, 오페라연구소	3
의과대학	의학연구원, 암연구소, 간연구소, 노화·고령사회연구소	4
보건대학원	보건환경연구소	1
행정대학원	한국행정연구소, 정보통신행정연구소	2
환경대학원	환경계획연구소	1
국제대학원	국제학연구소, 일본연구소	2
치의학대학원	치학연구소	1

칙을 수정하여 본부 직할 연구소에 소속시켰다. 기존 학칙은 2001년 이후 모든 연구소(원)를 주관대학(원)에 소속하도록 원칙을 정했다. 그러나 통일연구소를 발족한 2006년 4월부터 연구소(원)의 소속을 ‘주관기관’으로 변경했다. 주관대학(원)에서 주관기관으로 명칭 하나 변했을 뿐이나, 이로써 그동안 특정 주관대학(원) 소속으로 분류하기 모호

한 연구시설 설립과 이동이 훨씬 유연해졌다.

2006년 현재 주관 대학(원)에 따른 연구 시설 현황은 앞의 <표 4-3-22>와 같다.

그동안 학과나 단과대학은 연구소를 자신의 부속 기관 정도로 인식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반면 대학 내 연구소 발전이 학과와 대학 발전을 가져온다는 인식은 매우 미미했다. 연구소의 발전은 정부와 기업의 대규모 지원을 대학에 끌어와 학과의 재정 수입에 기여하고 연구 인력의 활용도를 높인다. 또한 연구소는 기존 분과 학문의 발전을 촉진함과 동시에 학제 간 연구를 통해 새로운 연구 영역을 개척하는 능동적 기관이다. 학제 간 연구로 탄생하는 새로운 학문 연구 영역들이 역으로 학과나 단과대학 체제의 변화를 이끄는 것은 원론적으로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본교는 연구소와 학과, 대학 간의 상호적이고 유동적인 관계를 뒷받침해 줄 제도를 마련하지 못했다. 본교가 국제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발돋움하면서 연구소(원) 활동 규모가 더욱 커지고 국제화되었다. 앞으로는 연구소(원)를 대학의 소속 기관으로 인식하는 기존 관념을 넘어 대학과 동등한 독립적 기관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열어 주어야 한다.

## 제 2 절 연구소(원)의 운영과 활동

### 1) 연구소(원)의 운영

#### (1) 연구소(원)의 조직

연구소(원)의 조직은 대체로 소(원)장, 운영위원회, 연구부(소), 행정실 등으로 구성한다. 이 외에도 각 연구소는 특성에 따라 편집실과 도서실 등을 운영한다. 연구소의 소(원)장은 2005년 현재 관련 대학·대학원·학과 또는 학부의 장이 겸하는 게 일반적이다. 운영위원회는 연구소의 기본 운영 계획, 연구소 규정의 제정과 폐지, 연구 계획의 수립과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대개 운영위원회는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조교수 이상의 교수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학장이 위촉하는 약간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연구소(원)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하위 조직은 연구부(소)이다. 경제연구소나 법학

연구소와 같이 단일 학과와 관련한 연구소는 보통 연구부를 하나만 두고, 학제 간 연구나 산학 협동이 활발한 공동 연구소는 연구부를 다수 둔다. 통합 연구원은 연구소와 달리 연구원 산하에 전문 연구소 다수를 부속 부서로 둔다. 예를 들면 기초과학연구원의 경우 통계연구소, 물성과학연구소 등 연구소 6곳을 부속 부서로 둔다.

이 밖에도 각 연구소는 행정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행정실을 두고, 연구 성격에 따라 편집실, 도서실, 자료실, 전산실 등을 둔다.

## (2) 연구소(원)의 인력

연구소(원) 활동의 핵심인 연구 인력은 연구원, 연구 보조와 지원 인력으로 나뉜다. 연구원은 2001년까지 연구원, 특별 연구원, 연구 보조원으로 구분하였으나, 2002년 4월에 제정한 '서울대학교연구원임용규정'에 따라 2002년 이후 책임 연구원, 선임 연구원, 연구원, 객원 연구원으로 구분하였다. 연구소 인력 현황은 <표 4-3-23>과 같이

<표 4-3-23> 연구소(원) 연구 인력 추이(1986~2003년)

(단위: 명)

구 분	연구원	특별 연구원	보조 연구원	계
1986	292	49	135	476
1987	313	51	139	503
1988	466	56	385	907
1989	536	99	580	1,215
1990	578	194	622	1,394
1991	619	188	1,017	1,824
1992	888	168	1,046	2,102
1993	852	141	1,121	2,114
1994	1,098	270	1,237	2,605
1995	1,098	270	1,237	2,605
1996	1,134	303	1,298	2,735
1997	1,139	444	1,509	3,092
1998	1,624	569	1,734	3,927
1999	1,530	377	1,890	3,797
2000	1,175	338	1,614	3,127
2001	1,017	418	965	2,400
2002	1,604	457	1,320	3,381
2003	1,684	417	1,326	3,427

출전: 『통계연보』, 각년판에서 작성.

1986년 이후 2003년까지 계속 증가했다. 1990년대 중반과 2000년대 초의 연구소 통합은 연구인력 수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2001년에 연구 인력 수가 다소 감소한 이유는 어학연구소, 학생생활연구소, 국제지역원이 연구 시설에서 부속 시설로 소속을 바꾸었기 때문이다.

2001년까지 대부분 연구소(원) 소(원)장이 본교 전임 강사 이상의 교수 중에서 연구원을 추천했으며, 임명은 각 단과대학(원)장이 했다. 사회과학연구원과 같이 여러 학과와 관련한 연구소(원)는 여러 학과에서 연구원을 위촉하여 임명했고, 단일 학과나 단일 대학과 관련한 연구소는 주로 해당 학과나 단과대학 교수들을 연구원으로 임용했다. 1990년대 이후 신설한 공동 연구소들은 연구 과제에 따라 수시로 연구원을 선정·임명했다. 그런데 관련 학과나 단과대학에 소속한 교수가 연구소(원)의 연구원을 겸하는 제도는 교육과 연구를 상호 보완한다는 장점도 있으나 연구에 치중하다 교육을 소홀히 하는 등의 문제가 드러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외부의 용역 연구 과제가 많은 연구소(원)는 교수들이 용역 연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 학과나 단과대학의 교육 운영에 차질이 생기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본교는 2002년 ‘서울대학교연구원임용규정’을 제정했다. 이 규정에서 기존의 일원적 연구원 지위를 책임 연구원, 선임 연구원, 연구원, 객원 연구원으로 세분했고, 총장이 직접 연구원을 임명하되 인건비는 연구소(원)에서 자체 충당하도록 정했다. 또 책임 연구원을 부교수 이상의 자격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 선임 연구원을 전임 강사 이상의 자격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 연구원을 석사학위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로 임용 기준을 다각화했다. 이로써 2001년까지는 연구원 자격을 전임 강사 이상의 교수에 국한한 반면, 2002년 이후 교수 이외의 연구 인력을 정식 연구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표 4-3-24〉).

〈표 4-3-24〉 연구소(원) 연구 인력 추이(2004~2006년)

(단위: 명)

연도	책임 연구원	겸임 연구원	선임 연구원	연구원	객원 연구원	전문 연구 요원	보조 연구원	연수 연구원	계
2004	607		341	539	266	99	1,786	104	3,742
2005	45	451	302	250	191	149	1,980	108	3,476
2006	55	771	363	311	221	101	2,033	176	4,031

출전: 『통계연보』, 각년판에서 작성.

〈표 4-3-25〉 연구소(원) 시설 개황(1989~2004년)

(단위: 권, 종, 천 원, m<sup>2</sup>)

연도	소장 도서	소장 학술지	기본 운영비	건물 시설
1989	47,375	39,898	1,854,017	158,522
1990	48,525	43,846	1,767,014	158,948
1991	52,915	45,660	2,247,575	44,807
1992	57,623	48,528	2,538,510	45,406
1993	57,623	48,528	2,538,510	45,406
1994	65,755	59,382	4,896,195	89,408
1995	69,501	65,274	5,590,494	49,618
1996	67,601	61,508	7,600,342	75,665
1997	90,534	77,912	11,117,856	170,761
1998	115,043	102,443	11,550,020	126,368
1999	135,638	65,483	12,010,646	98,923
2000	116,386	49,713	11,185,940	82,132
2001	180,683	82,556	12,008,503	88,898
2002	291,609	78,947	10,463,647	145,111
2003	195,751	66,192	9,843,298	147,791
2004	205,205	80,898	10,568,681	143,967

비고: 1. 기본 운영비는 인건비를 포함한다.

2. 2000년까지는 법정 연구소(본부 직할 연구소와 단과대학 부속 법정 연구소) 시설 집계이며, 2001년부터 전체 연구소 시설 집계이다.

출전: 『통계연보』, 각년판에서 작성.

본교는 1976년 8월 20일자로 각 연구소 규정에 ‘특별연구원규정’을 마련하여 특별연구원 제도를 만들었다. 특별 연구원은 연구소의 활동 분야와 관련한 학내 전임 강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1년이었다. 대개 본교 교수 이외의 관련 분야 인사를 특별 연구원으로 임명했는데 고정적인 보수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특정 연구 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 활동비만 지급했다. 특별 연구원은 2002년 이후 ‘객원 연구원’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그 외 각 연구소는 연구원과 특별 연구원의 연구 활동을 돕는 보조 연구원을 두고, 행정 업무를 담당할 연구 지원 인력을 배치한다. 이 밖에 도서나 자료의 정리, 관리를 위해 전문 사서를 두거나, 이공학 분야 연구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공동 시설이나 연구 기자재를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기술 인력을 둔다.

### (3) 연구소(원) 시설

본교 연구소(원)의 시설 현황을 통해 연구소 연구 여건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자. 연구소(원)의 시설 규모는, 연구소(원)의 지위 변동 등의 이유로 간혹 크게 축소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1989년 이래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소장 도서와 학술지 수는 해마다 증가하여 2004년 현재 각각 20만 권, 8만 종 정도이다. 인건비를 포함한 기본 운영비는 1989년 18억 원에서 2004년 1백억 원 규모로 증가했다. 2003년 이후 연구소 연구비가 1천억 원 이상이므로 기본 운영비는 연구비의 약 10%에 달한다.

## 2) 연구소(원)의 연구 재원

### (1) 연구소 운영의 어려움과 연구비 부족(초창기~1980년대 후반)

연구소가 기본적인 운영과 연구 활동을 하려면 기본 운영 경비와 연구비가 필요하다. 2006년 현재까지 본교는 연구소 중 구 본교 직할 법정 연구소에 한해 국고, 기성회 예산에서 기본 경비를 직접 지원하고, 대부분의 구 대학(원) 부속·부설 연구소의 기본 운영비는 각 대학(원)의 예산에서 자체 충당하도록 한다. 연구소의 연구비 재원은 정부 기관의 지원금과 각 연구소의 용역 계약에 의한 용역 연구비로 나눈다.

1980년대 후반까지 본교 직할 법정 연구소는 국고에서 기관 운영비, 수용비, 재료비, 특별 판공비, 제세 공과금 등을, 기성회 예산에서 수용비, 행사비, 판공비 등을 지원받았다. 예를 들어 1984년 본교 직할 법정 연구소들은 동일하게 240만 원의 국고 지원을 받았으며, 기성회 지원금은 연구소마다 달랐다. 연구소에 대한 기본 경비 지원액은 대개 미미한 상황이었지만 직접적인 경비 지원조차 받지 못하는 비법정 연구소는 운영이 더욱 어려웠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비법정 연구소 대부분이 법정 연구소로 승격하려는 운동을 추진했다.

본교 예산 중 연구소 연구비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었다. 연구소들 대부분은 문교부나 산학협동재단 등 외부 기관, 외국 기관의 비정기적 연구비 지원에 의존했다. 1976년부터 1983년까지 총 93건의 연구 과제 지원이 있었는데, 이 중 64건을 문교부에서 지원했다. 즉 8년 간 연평균 연구소 연구 과제는 11건에 불과하며, 각 연구소가 하나의 과제를 수행한다고 가정하면 전체 연구소 39곳 중 30% 미만이 외부 지원을 받았다. 연구소 대부분이 8년 중 2~3년만 연구비 지원을 받았는데, 이 때문에 각 연구소는 지속적인 연



구 계획을 세울 수 없었다.

일부 연구소는 비공식적 용역 연구를 통해 연구비를 충당했다. 용역으로 연구비를 충당하던 연구소는 대개 정부나 기업의 현실적 요구에 어느 정도 부응할 수 있는 분야의 연구소들이었다. 예컨대 생산기술연구소, 환경계획연구소, 행정조사연구소, 경영연구소 등은 용역 연구를 통한 연구비 조달이 용이한 편이었다. 특히 환경대학원 부설 환경계획연구소는 정부 기관이나 외부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전혀 연구비를 지원받지 않았지만, 용역 연구로 매년 수억 원에 달하는 연구비를 받았다. 그러나 용역 연구 활동은 용역 제공자의 상황에 따라 안정적이지 못하므로 궁극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았다. 연구비 지원이라는 물질적 혜택 때문에 교수 인력을 전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또 정부 기관이나 기업체의 요구를 충족하기 어려운 인문 과학이나 기초 과학 분야 연구소는 용역마저 얻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연구소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자원 조달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했다.

## (2) 연구소(원) 연구비 재원과 규모의 확대(1980년대 말~현재)

서울대학교는 연구처 출범 이후 1980년대 후반부터 각 연구소(원) 연구비를 총체적으로 집계했다. 먼저 지원 기관별 연구소 연구비 수혜 현황을 살펴보면(〈표 4-2-26〉), 1980년대 중반부터 연구소 연구비는 크게 늘어나 1985년 34억에서 2005년 1,163억으로 20년 동안 무려 34배 이상 증가했다. 연구 재원 중 기타를 제외하면, 1990년대 말까지 교육부의 지원액이 가장 크고, 1999년부터 일반 재단의 연구비 지원이 교육부의 지원액을 앞섰다. 2000년대에 들어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원액보다 일반 재단과 기타의 연구비 지원액이 더 크며, 특히 기타의 연구소 연구비는 전체 연구소 연구비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그러나 현재 본교 연구소 연구비 집계상 기타와 일반 재단, 외국 지원의 출처가 불분명하므로 더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다음으로 연구소의 연구비에서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용역 연구비를 살펴보자. 〈표 4-3-27〉에 1989년부터 1998년까지 본부 직할 법정 연구소 23곳과 대학 부속 법정 연구소 10곳을 합하여, 법정 연구소 총 33곳의 용역 연구비 수주 실적을 정리했다. 단 이 표는 1998년 법정 연구소 33곳을 기준으로 이전 시기까지 소급 적용했으므로 1998년 이전의 실제 법정 연구소 현황을 반영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1990년 법정 연구소는 본부 직할 법정 연구소 19곳, 대학 부속 법정 연구소 4곳으로 총 23곳이었다. 따라서 〈표 4-3-27〉의 1990년도 수치는 해당 연도의 법정 연구소 23곳과 비법정 연구소 10곳

〈표 4-3-26〉 지원기관별 연구소 연구비 수혜 상황(1985~2004년)

(단위: 천 원)

연도	교육인적자원부	교내 재단	일반 재단	외국 지원	기타	계
1985	931,997	3,575	63,000	94,436	2,327,469	3,420,477
1986	1,068,800	20,200	131,800	48,026	3,312,118	4,580,944
1987	1,455,476	215,865	353,786	50,751	4,650,776	6,726,654
1988	1,939,806	267,900	551,707	30,000	3,819,505	6,608,918
1989	1,935,976	95,159	1,128,504	56,000	4,712,383	7,928,022
1990	2,113,650	11,100	592,217	46,000	2,586,589	5,349,556
1991	2,067,500	169,000	1,147,135	-	4,416,964	7,800,599
1992	2,738,250	103,700	769,686	-	7,246,544	10,858,180
1993	3,160,560	157,700	2,833,803	19,768	14,327,951	20,499,782
1994	4,940,210	223,050	2,922,610	16,000	19,419,906	27,521,776
1995	6,906,340	88,195	4,807,548	26,500	22,480,591	34,309,174
1996	9,726,182	319,647	2,135,961	211,220	36,054,886	48,447,896
1997	10,846,595	467,537	3,853,153	44,400	41,715,572	56,927,257
1998	8,397,800	609,279	4,644,185	88,743	27,199,536	40,939,543
1999	2,961,904	282,700	6,142,396	244,880	38,741,644	48,373,524
2000	2,323,289	536,810	6,893,256	1,117,904	50,540,141	61,411,400
2001	2,763,158	1,307,176	12,528,114	776,986	62,658,047	80,033,481
2002	4,147,443	1,250,445	22,813,592	66,360	71,042,570	99,320,410
2003	6,384,451	1,981,407	15,774,312	263,770	77,364,708	101,768,648
2004	1,837,599	3,321,285	23,129,689	1,153,859	84,090,226	113,532,658
2005	11,469,051	1,818,759	28,876,002	1,178,972	72,986,837	116,329,622

비고: 2000년까지는 법정 연구소 연구비 집계이고, 2001년도 이후는 전체 연구소 연구비 집계이다.

출전: 『통계연보』, 각년판에서 작성.

(1998년도까지 법정화됨)을 포함하는 용역 연구비 수주 집계이다. 연구소 33곳의 용역 연구비는 1980년대 말 이후 계속 증가했고, 적어도 1990년대 초까지 〈표 4-3-26〉의 연구소 연구비보다 컸다. 그러나 1990년대 중후반부터 용역 연구비의 증가 추세는 주춤하며 〈표 4-3-26〉의 연구소 연구비와 비슷하거나 적어졌다. 그리고 1999년부터 연구소 용역 연구비 집계가 없으므로 최근의 변화는 알 수 없다.

〈표 4-3-27〉 법정 연구소의 용역 연구비 수주 실적(1989~1998년)

(단위: 천 원)

연도	용역 연구비 수주 실적		
	본부 직할 법정 연구소(23곳)	대학 부속 법정 연구소(10곳)	합계
1989	10,301,680	3,219,092	13,520,772
1990	9,963,359	3,204,615	13,167,974
1991	13,480,059	3,165,819	16,645,878
1992	13,279,621	4,107,377	17,386,998
1993	19,757,664	2,733,199	22,490,863
1994	25,352,275	7,344,626	32,696,901
1995	28,212,102	9,527,551	37,739,653
1996	34,963,528	11,841,125	46,804,653
1997	40,204,227	11,457,122	51,661,349
1998	33,184,453	6,255,064	39,439,517

출전: 『통계연보』, 각년판에서 작성.

### 3) 연구소(원)의 연구 실적 개황

대학 내 연구소(원)의 학술지와 논문집 출판은 연구소(원)의 연구 활동을 가늠하는 분석 지표 가운데 하나이다. 학술지는 연구 발표의 장이므로 학술지 발간의 양적, 질적 향상은 곧 연구원의 연구 활동이 그만큼 활발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1946년 개교 이후 1950년대까지 본교 학술지는 1952년에 발간한 『문리대 학보』와 1954년에 발간한 『서울대학 논문집』이 전부였다. 1960년대 연구소를 활발히 설립하면서 연구소 간행 학술지를 중심으로 학술지 종류가 다양해졌다. 1960년대 각 연구소에서 간행한 학술지를 정리하면 〈표 4-3-28〉과 같다.

1970년대 본교 학술지는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맞이했다. 관악 캠퍼스로 이전하면서 기존 단과대학 논문집을 통폐합하였고, 연구소 신설에 따라 각 연구소 간행 학술지를 늘렸으며 일부 학과와 부속 기관에서 새로 연구지를 발간했다. 연구소 간행 학술지의 신규 발간 상황을 살펴보면, 1976년 농업문제연구소와 과학교육연구소가 각각 『서울대학교 농업 연구』와 『과학 교육 연구 논총』을 연 2회 간행했다. 또 1977년부터 미국학연구소가 『미국학』을 연 1회 간행했고 사회과학연구소는 1978년부터 『사회 과학과 정책

〈표 4-3-28〉 1960년대 연구소 간행 학술지

학술지	소속 연구소	창간 연도	간행 분류	비고
업적집	생약연구소	1962	연간	폐간(1992년)
학생 연구	학생지도연구소	1962	반년간	폐간(1996년)
경상 논집	경영연구소	1962	연간	명칭 변경: 경제 논집(1963년)
동아 문화	동아문화연구소	1963	연간	
신문연구소 학보	신문연구소	1964	연간	명칭 및 발간 소속 변경: 언론 정보 연구 (언론정보연구소 간행, 1994년)
법학	법학연구소	1964	반년간	발간 소속 변경: 법과대학(1959년) → 법학연구소(1964년)
어학 교육	어학연구소	1965	반년간	명칭 변경: 어학 연구(1965년)
언어 교육	어학연구소	1969	연간	폐간(1974년)
경영 논집	경영연구소	1967	계간	
경영 실무	경영연구소	1967	계간	명칭 변경: 경영 사례 연구(1977년)

출전: 『서울대학교 40년사』, 618쪽과 『통계연보』, 각년판에서 작성.

연구』를 연 3~4회 간행했다. 1979년 인문과학연구소를 설립하여 인문대학의 『인문 논총』을 인계받아 간행했다.

1980년대 학술지 간행 상황은 몇 개의 연구소에서 학술지를 신규로 간행했을 뿐 1970년대의 상황과 유사했다. 1980년 한국문화연구소가 『한국 문화』를, 체육교육연구소는 『체육 교육 연구 논집』을 창간했고, 1982년 치학연구소는 『치대 논문집』을 간행했다.

1990년대에는 학술지 21종을 새로 창간하였으며 이 중 15종이 자연 과학과 공학 계통 학술지여서 이 분야의 연구 활성화를 짐작케 하지만, 신규 발간 학술지의 상당수가 소식지나 보고서, 논문 수록집 수준에 그치고 있다. 1999년 현재 본교 본부 직할 연구소의 학술지 논문집 상황을 살펴보면 〈표 4-3-29〉와 같이 본교 직할 연구소 23곳이 총 42종의 소식지, 학술지, 논문집을 발간했다.

1980년대 이전까지 학술지 발간은 연구소의 활동을 직접 보여 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였다. 그러나 본교가 1980년대 말부터 연구 중심 대학을 표방하고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하고자 노력하면서 연구소 활동을 나타내는 지표로 교내 학술지 발간과 더불어 연구 과제 수행 건수, 논문 출판 수, 발표회 개최 수 역시 중요해졌다. 1986년과 비교할 때 2004년 연구소의 연구 과제 수행은 5.5배, 정기 간행물 발간은 6배, 논문은 10배, 발표

〈표 4-3-29〉 본부직할연구소 학술지·논문집 발간 현황(1999년 현재)

연구소	구분	간행물	간행 구분	창간 연도
천연물과학연구소		천연물 과학 논총	연간	1962
어학연구소		어학 연구	계간	1965
학생생활연구소		학생 연구	연간	1962
사회과학연구원		한국 사회 과학	계간	1979
		Development and Society	반년간	1971
		사회 복지 연구	반년간	1989
		비교 문화 연구	연간	1993
		한국 정치 연구	연간	1987
경제연구소		경제 논집	계간	1962
		Seoul Journal of Economics	계간	1988
법학연구소		법학	계간	1959
한국문화연구소		한국 문화	반년간	1980
		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	연간	1988
미국학연구소		미국학	연간	1977
		모노그래프 시리즈	연간	1976
기초과학연구원		통계 상담 사례집	연간	1991
		물성과학연구소 연구 논총	연간	1992
언론정보연구소		언론 정보 연구	연간	1964
의학연구원		인구 의학 연구 논집	연간	1975
		폐연구소 연구 보고	연간	1990
환경안전연구소		환경 연보	연간	1988
유전공학연구소		연구 논문집	연간	1993
반도체공동연구소		반도체공동연구소 소식지	계간	1989
공학연구소		공학연구소 보고	연간	1976
인문학연구소		인문 논총	반년간	1976
신소재공동연구소		신소재 소식	계간	1991
자동화시스템공동연구소		자동화 시스템 소식	계간	1991
		자동화 시스템 연차 보고서	연간	1996
국제지역원		국제·지역 연구	계간	1991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Asian Studies	연간	1994
정밀기계설계공동연구소		연구 보고	계간	1993
		정밀 기술 심포지움 프로시딩	연간	1993
		정밀 기계 설계	반년간	1995
컴퓨터신기술공동연구소		소식지	연간	1990
		연구 논문 수록집	연간	1996
		연차 보고서	연간	1997
뉴미디어통신공동연구소		소식지	계간	1995
		논문집	연간	1996
교육종합연구원		과학 교육 연구 논총	연간	1974
		국어 교육 연구	연간	1994
		사회 교육 연구	연간	1997
		외국어 교육 연구	연간	1998

출전: 『통계연보, 1999』, 61쪽.

〈표 4-3-30〉 연구소 연구 실적 상황(1986~2004년)

(단위: 건, 중, 편, 회)

연도	연구 건수	정기 간행물	부정기 간행물	논문	발표회
1986	270	20	8	329	39
1990	380	27	17	410	66
1994	725	50	49	756	23
1998	1,001	89	47	2,714	829
1999	826	81	48	2,255	548
2000	920	71	47	2,728	753
2001	1,214	133	592	5,333	1,619
2002	1,595	107	71	3,139	1,480
2003	1,379	111	94	3,203	2,375
2004	1,483	119	138	3,427	2,207

비고: 2000년까지는 법정 연구소 실적 집계이고, 2001년부터는 연구소 전체 실적 집계이다.  
출전: 『통계연보』, 각년판에서 작성.

회는 56배로 증가했다.

#### 4) 연구소(원) 평가 제도

연구소(원)를 평가하는 근거는 서울대학교설치령 제9조 4항과 학칙 제19조 7항이다. 이에 의하면 총장은 매 2년마다 연구소(원)의 운영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존속 또는 폐지 여부를 결정하며, 또 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 지원을 달리하여 우수 연구소(원)를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본고는 1987년 ‘서울대학교 발전장기계획(1987~2001년)’을 세우면서 연구소(원) 평가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했다. 이 계획에서 모든 연구소의 활동 실적을 매 3년마다 평가하여 공표하고, 활동 실적이 부진한 연구소를 폐지하여 연구소의 기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1994년 하반기에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이공계 연구소 27곳을 대상으로 제1단계 연구소 평가를, 1995년 상반기에 인문·사회계와 예술·체육계 연구소 41곳을 대상으로 제2단계 연구소 평가를 실시했다.

제1단계 이공계 연구소 평가에서 평가 영역을 연구소의 기능, 연구소의 조직과 운영, 연구 여건, 연구소의 활동으로 나누고, 그중 연구 활동과 연구 여건에 많은 비중을 두었

〈표 4-3-31〉 제1단계 이공계 연구소 평가(1994년)

평가 영역(배점)	평가 항목(배점)	평가 지표
연구소의 기능(10)	연구소 기능(10)	연구소 설치 목적, 연구소의 역할 타 연구소와 중복 여부, 학과 혹은 대학(원)과의 협력 체제
연구소의 조직 및 운영(10)	연구 조직 및 운영(10)	연구소의 운영 내규의 적절성 연구소의 조직, 연구소 발전 계획 연구소 자체 평가, 운영위원회의 기능
연구 여건(30)	연구 인력(10)	전임 교수, 겸임 교수 관련 대학원 학생, 전임 연구 지원 인력
	연구 시설(10)	외곽 시설 확보 정도, 내부 시설 확보 정도 기자재 확보 정도
	연구비(10)	연구비 확보 정도, 연구비 재원별 지출 연구비 지출 구성(인건비, 운영비, 연구 사업비)
연구소 활동(50)	연구 수행(20)	연구 실적: 논문, 연구 실적: 특허, 보고서 소속 교수 간 공동 연구 조직화 실적 학문 발전 기여도, 산학 협동 및 정책 자문 활동
	연구 진흥(15)	자체 연구비 확보 노력, 교수 개인별 연구비 유치 노력, 연구 조원에 대한 재정 보조 노력
	연구 지원(10)	학술 정보의 축적, 각종 학술회의 개최 행정 지원 및 공동 지원 활동(공동 구매, 공동 기기 운영 등) 연구비 관리, 연구 홍보
	교육 활동(5)	공개 강좌, 사회 교육, 연수 제도

출전: 『서울대학교 연구소평가, 1995』, 10쪽.

다. 연구소 평가 결과 연구소 27곳 가운데 19곳이 가장 좋은 A등급을 받았고, 6곳이 B등급, 2곳이 C등급을 받아 개선할 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등급을 받은 연구소 중 반도체공동연구소, 자동화시스템공동연구소, 정밀기계설계공동연구소, 농업개발연구소, 암연구소는 모든 평가 항목에서 A등급을 받았다. 한편 B등급과 C등급을 받은 연구소는 기본적인 존립을 위해 시대 변화에 따라 연구 대상과 범위의 재정립, 전용 연구동 건립과 인력 확보, 연구비와 연구 기금 적립 등을 개선 과제로 지적받았다.

제1단계 이공계 연구소 평가에 이어 1995년 상반기에 제2단계 인문·사회계 연구소(36곳)와 예술·체육계(5곳) 연구소를 평가했는데, 이때 제1단계 연구소 평가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시정했다. 첫째, 평가단 구성의 문제로 제1단계 평가에서 평가 위원 15명을 다섯 팀(1팀 당 3명)으로 나누어 1팀이 5~6개의 연구소를 평가했는데,

그 결과 팀별로 평가 편차가 심하여 일관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지 못했다. 이에 제2단계 평가에서 평가 위원을 3명으로 구성하여 동일 팀이 전체 연구소를 평가하도록 시정했다. 둘째, 평가 방법의 문제로 제1단계 평가에서 대상 연구소의 자체 평가서에 상당히 의존하여 평가의 공신력과 객관성이 떨어졌다. 제2단계 평가는 대상 연구소에 객관적 증빙 자료를 요구하고 그 자료에 대해 철저하게 확인한 후 시행했다. 셋째, 평가 기준의 문제로 제1단계 평가에서 평가 영역과 평가 항목 사이에 중복이 있고 연구 수행 성과에 대한 배정 비율을 20%로 낮게 책정했으며 평가 척도를 4등급으로 구성하여 변별력이 약했다. 이를 시정하여 제2단계 평가에서 평가 척도를 A, B, C, D, E의 5단계로 세분했다.

제2단계 인문·사회계와 예술·체육계 연구소 평가 결과, 연구소 41곳 가운데 경제연구소, 한국문화연구소, 지역종합연구소가 A등급, 학생생활연구소, 사회과학연구소, 미국학연구소, 경영연구소, 러시아연구소, 사회발전연구소, 교육연구소, 한국행정연구소는 B등급을 받았다. 그런데 C등급을 받은 연구소는 15곳, D등급을 받은 연구소 역시 15곳에 이르는 등 연구소 41곳 가운데 C와 D등급을 받은 연구소가 무려 30곳에 달했

〈표 4-3-32〉 제2단계 인문·사회·예체능계 연구소 평가(1995년)

평가 영역(배점)	평가 항목(배점)	평가 지표
연구소 조직 및 운영(10%)	연구소 조직(2.5%)	연구소 규정과 실제 조직의 일치 여부 및 적정성
	연구소 운영(7.5%)	운영위원회 개최 실적, 자체 평가 실시 여부 및 정밀성 발전 계획 마련 여부 및 적정성
연구 여건(30%)	연구 인력(10%)	연구원(연구원, 특별 연구원, 보조 연구원) 수 연구 지원 인력(조교, 행정 지원 인력) 수
	연구 시설(10%)	독자적 공간 확보 여부 및 적정성 기자재(연구용, 사무용, 도서) 확보율
	연구비(10%)	연구원 1인 당 평균 연구비
연구소 활동(60%)	연구 실적(40%)	연구원 1인 당 논문(공연, 전시) 발표 실적 - 교내 학술지, 국내 학술지, 해외 학술지
	학술 행사(10%)	학술 행사 개최 실적 - 교내 학술 행사, 국내 학술 행사, 국제 학술 행사
	학술지(5%)	학술지 발간 여부 및 충실성
	사회봉사(5%)	교육 및 사회봉사 프로그램 운영 실적

출전: 『서울대학교 50년사』, 912쪽.



다. 특히 D등급을 받은 15곳 연구소가 모두 단과대학 부설 비법정 연구소라는 점, 그 비율이 인문 사회계와 예술 체육계 단과대학 비법정 연구소 전체 31곳의 절반에 가깝다는 점이 당시 학내에 큰 충격이었다.

1996년도 하반기에 이공계 연구소 35곳에 대해 제3차 연구소 평가를 실시했다. 3차 평가는 제2차 평가에 기반을 두어 제1차 이공계 연구소 평가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천연물과학연구소, 자연과학종합연구소, 유전공학연구소, 반도체공동연구소, 신소재공동연구소, 자동화시스템공동연구소, 정밀기계설계공동연구소, 이론물리학연구소, 암연구소 등 9곳이 A등급을 받았다. B등급은 7곳, C등급은 15곳, D등급을 받은 연구소는 4곳이었다.

세 번에 걸친 연구소 평가를 바탕으로 본교는 연구소의 규모, 기능과 성격에 따라 평가 기준을 다르게 마련하고자 했다. 앞선 세 차례 평가에서 성격이 각기 다른 연구소에 계량화한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각 연구소의 고유한 특성을 간과하고 연구소 활동의 질적인 측면을 파악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질적 평가를 위한 대안으로 1998년 연구소 평가 항목에 향후 발전 가능성 영역을 추가해 과거 평가 결과를 개선하였는가와 장단기 발전 계획이 실현성 있는가를 평가하기 시작했다. 이와 병행하여 다각적인 연구소 평가 기준과 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를 하여 1999년 9월 「서울대학교 연구소 평가 기준 및 방법 개발」, 2001년 「서울대학교설치령 개정에 따른 연구소 평가에 관한 연구」, 2003년 「서울대학교 연구소 평가 기준 및 방법 개발 연구」, 2004년 「서울대학교 연구소 평가 기준 및 방법 개발 연구」를 발간했다.

2001년부터 인문·사회계, 이공계, 예술·체육계 각각의 연구소 평가를 동시에 실시하고 각 학문 분야별 연구소(원)의 규모에 따라 개별 연구소와 통합 연구소로 나누어 평가기준을 달리했다. 또한 연구소의 조직과 운영, 연구 여건, 연구소 활동, 향후 발전 가능성에 대한 정량 평가와 함께 정성 평가를 실시했다.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2005년 연구소 평가의 기준과 방법을 살펴보면 1994년도 제1단계 평가에 비해 항목과 내용, 그리고 지표의 배분과 가중치가 상당히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표 4-3-33>에서 보듯 2005년 연구소 평가에서 분야와 종류에 따라 연구소 배점 기준은 크게 차이가 났다. 통합 연구원의 경우 개별 연구소에 비해 연구소의 조직 및 운영 항목 배점이 높은 반면, 개별 연구소의 경우 통합 연구원보다 연구소 활동에 대한 배점이 높았다. 중점 사업 실적 및 향후 계획 항목의 경우 인문·사회계 연구소와 예체능계 연구소가 이공계 연구소보다 배점이 약간 높으며, 연구 기자재가 많이 필요한 이공계의 경우 연구 여건 배점이

〈표 4-3-33〉 연구소 분류별 배점 비교(2005년)

구분	인문·사회계 연구소		예술·체육계	이공계 연구소	
	통합 연구원	개별 연구소	연구소	통합 연구원	개별 연구소
연구소의 조직 및 운영	25	15	15	30	15
연구 여건	15	15	15	20	20
연구소 활동	45	55	55	40	55
중점 사업(실적) 및 향후 계획	15	15	15	10	10

출전: 『서울대학교 연구소 평가보고서, 2005』, 105-114쪽에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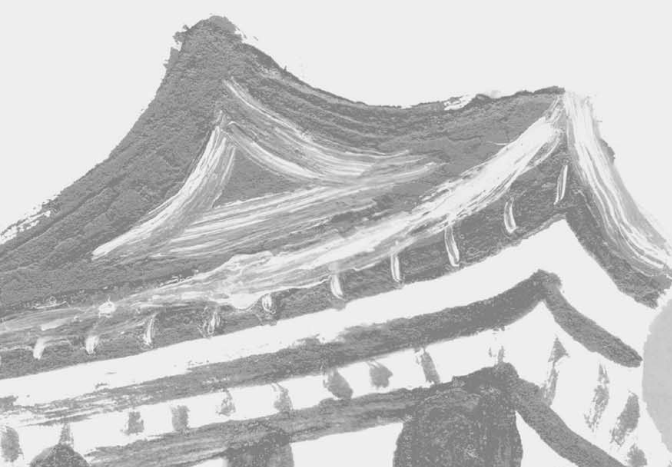
다른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1980년대 말부터 본교 연구소(원)의 조직과 규모는 꾸준히 증가했다. 인력과 시설, 연구비 수혜 총액에서 연구 실적까지 모든 수치와 지표에서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본교 연구소(원)는 학과(부)나 대학원과 달리 제도적 뒷받침이 미약한 형편이다. 최근에 연구소와 연구원에 관한 학칙과 규정 변화를 통해 연구소 지원제도를 상당부분 합리화했으나, 여전히 연구소 운영과 활동에 대한 관리체제는 온전하지 못하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연구소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우수 연구소를 발굴해 집중 지원하고 부실 연구소를 퇴출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그러나 실제로는 연구소 간의 이합집산이나 명칭과 소속 변경을 유도했을 뿐, 집중적으로 육성된 연구소나 퇴출된 연구소는 거의 없다.

대학에서 연구소(원)는 제도적 유연성이 크기 때문에 대학 발전을 위해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이다. 선진국의 우수 연구대학에서 연구소가 차지하는 위상은 학과(부)나 대학원 못지않다. 대학 부설 연구소에서 출발한 연구소가 대학의 규모를 넘어 초대형 연구소로 성장하기도 한다. 이제 본교는 세계 일류의 연구 중심 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해 대학 연구소의 전략적 발전을 구상할 때이다.



제 5 부  
학생





## 제1장 대학 문화의 흐름

문화는 보통 “구성원들에 의해 공유되는 지식, 신념, 행위의 총체”로 정의하지만, 구체적인 개념 정의는 매우 다양하다. 특히 ‘대학 문화’는 대학이라는 제도에 속해 있는 문화, 대학의 구성원이 주체인 문화, 대학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대학과 관련한 모든 문화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다. 또한 대학 문화 속에서 서로 층위와 성격을 달리하며 다양하게 존재하는 많은 “하위 문화”들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 문화를 엄밀하게 정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 글에서는 대학 문화를 “대학의 구성원 가운데 학생들이 공유하는 생활양식과 인식의 총체”로 정의하여, 대학 문화의 흐름과 양상을 4시기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자료는 기존 교사(校史)와 함께 학보 『대학신문』, 교지 『관악』, 대학생활문화원 연구지 『학생연구』와 『신입생특성보고서』, 학생잡지 『서울대저널』과 『학회평론』, 기록관 구술 자료, 대학생과 대학 문화 관련 연구 성과 등을 이용했다.

## 제1절 낭만적 대학 문화의 형성(1946~1960년)

### 1) 설립 초기 '서울대생'의 모습

1946년 새로 설립한 국립서울대학교가 1년여에 걸친 '국립서울대학교설립안' (이하 국대안) 파동을 거치면서 어렵게 기틀을 잡자, 학생들도 '서울대생'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비로소 묶일 수 있었다. 그러나 초창기 서울대생들은 '국대안 파동' 만큼이나 많은 어려움과 굴곡을 겪어야 했다. 먼저 서울대생들은 여러 학교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학생들 사이의 '이질감'을 극복해야 했다. 학생들은 미군정이 학원을 통제하여 대학자치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국대안을 반대했지만, 사실 그 기저에는 일제 식민지기 이래 서로 다른 전통과 성격, 목적을 지닌 학교들을 하나로 합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깔려 있었다. 특히 경성대학 출신들과 다른 전문학교 출신들 사이의 이질감이 컸다. 따라서 학생들이 상호 이질감을 극복하고 서울대생으로서 정체성을 형성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했다.

이질감 극복과 정체성 형성이 신생 국립서울대학교 학생들의 과제였다면, 초창기 열악한 학업 여건은 이 시절 모든 학생들이 겪었던 어려움이었다. 우선 국대안 파동 이후 좌익 계열 등 비판적이고 진보적인 교수들이 제거되어 교수 숫자가 부족했고, 행정적 지원 체제의 미정비, 사회적 혼란 등으로 교육 과정 운영을 비롯한 학사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1947년 당시 국립서울대학교 학칙에는 1/3 결석 시 해당 과목 시험을 치를 수 없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관행적으로 출석을 거의 관리하지 않았다. 학사 관리의 부실은 학생들의 경제 사정과 관련이 있었다. 당시 국립서울대학교 학생의 80%가 고등학교 선생이거나 신문 기자, 공무원 등의 직장인이었다. 다수 학생이 먹고 살기 위해 직장을 갖다 보니 엄격한 학사 관리란 처음부터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열악한 학업 환경에서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하였을까? 정상적으로 수업을 하는 과목은 몇 되지 않아 대부분의 과목은 개인 스스로 독서를 하거나 동료들과 함께 소모임을 하며 학습했다. 직장을 다니며 생계를 유지해야 했던 학생들은 학교에 다니면서도 "독학 자습"을 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설립 초기 서울대생들의 모습은 복장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해방 직후 남학생 복장은 대개 군복이 아니면 중학교 때의 '쓰메에리' (1960년대 중·고등학교 교복과 비슷한 옷)

양복이었다. 일본이 패하고 물러간 뒤 각지에 있는 일본군 창고에서 나온 군복이 시장에 쏟아져 나왔는데, 값이 싸고 튼튼했기 때문에 학생들은 군복을 많이 입었다. 반면 스메에리 양복은 형제나 선배에게서 물려받아 입는 경우가 많았다. 신발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 학생들은 ‘헨조기’ (일본 군화)를 신었고, 나머지 학생은 ‘지까다비’ (노동화)나 운동화를 많이 신고 다녔다. 미군이 진주한 뒤 시장에 미군 물자가 나오자 학생들은 미군 야전 잠바와 시지 하의를 사 입고, 장군 군화를 신고 다니기 시작했다. 얼마 안 가서 남학생들 다수가 미군복을 입었다. 여학생들은 대부분 한복 차림(저고리와 통치마)이었다. 해방 때까지 여자 중학생 교복이 양복이긴 하였으나 하의(下衣)가 ‘뽀뽀’였기 때문에 대학에서까지 그대로 입기가 어려워 한복을 입었던 것이다. 신발은 대부분 운동화였다.

1947년 3월 학교 당국은 처음으로 교복과 교모(校帽)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착용을 장려했다. 교모는 베레모였고 ‘천’은 외국산과 국산 두 종류가 있었다. 교복은 감색으로 소위 ‘해군사지(地)’를 1양분(養分) 7,000원에 학교에서 팔았으며 조제(調製)는 자유로 하되 모양만 더블로 정하고 타이를 매도록 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은 이 교복에 냉담하게 반응했다. 학생들은 베레모가 학생보다 화가에게 어울리며, 교복 천이 미군복보다 비싸고 질도 떨어진다는 이유로 불만이 많았다. 여학생 교복은 감색이나 흑색 투피스였고(여름에는 흰 블라우스에 스커트), 교모는 역시 베레모였다. 여학생들은 남학생들 이상으로 모자 쓰기를 완강히 거부했다. 서울대생이 교복과 교모를 착용하지 않는 전통은 이때부터 생겨났다.

학교 설립 직후 어려운 환경에서 생계를 유지하며 독학 자습했던 학생들은,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한국전쟁으로 더 큰 시련을 겪어야 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학생들 대부분은 각처로 흩어졌지만, 일부 학생은 6월 29일 수원에 모여 경기도 일대의 다른 학교 학생들과 함께 비상학도대(非常學徒隊)를 조직하였다. 비상학도대 가운데 일부는 전투대로 당시 국방부 정훈국 지도 아래 실전에 참가했으며, 일부는 선전대로서 각 지방에 파견되어 전황 보도, 가두 선전, 피난민 구호, 남하 학도 규합 등의 활동을 했다. 한편 남하하는 정부를 따라서 대전에 집결한 학생들은 충청도 지방 학생들과 함께 남하하는 북한군을 제2선에서 저지하려고 7월 1일 의용학도대(義勇學徒隊)를 조직하여 학도병을 모집하고 국민의 사기를 독려하는 등의 선전 활동을 하였다. 이후 이 두 학도대는 정부를 따라 대구로 이동하여 7월 19일 대한학도의용대(大韓學徒義勇隊)로 통합, 개편하였다. 부산에 집결한 학생들도 대한학도의용대(大韓學徒義勇隊)를 조직하여 앞서

대구에서 결성한 의용대와 함께 낙동강 전선에 배치되었다. 한국전쟁에 학도의용대로 참전하여 전사한 서울대생은 모두 22명이었고, 이는 전사한 전체 학생의 1%였다. 그런데 한국전쟁 당시 인민의용군이라는 이름으로 북한군에 참여한 학생들도 있었다. 한국전쟁 초기 북한은 점령 지역에서 젊은이들을 모아 인민의용군을 조직하여 전선에 투입했다. 인민의용군의 규모는 약 10만~40만 명 정도로 추산하는데, 그중에는 서울대생도 상당수 포함되었다. 학생들이 인민의용군에 들어간 동기는 정치적 동의에 의한 자원 입대부터 살아남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 강제 징집까지 다양했다. 인민의용군에 참여한 서울대생들의 구체적인 규모와 참여 동기, 전쟁 이후 행적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한국전쟁 당시 전시연합대학과 부산 가교사에서 학생들은 매우 열악한 생활을 했다. 연구와 실험을 위한 시설이나 기자재는 물론 변변한 교재 하나 구할 수 없었다. 물론 1952년 서울에 있던 책 2만 권을 부산으로 가져왔고, 1953년 5월에는 유엔한국재건단(UNKRA) 원조 도서 제1차연도(1952년도)분 39,200권이 부산항에 도착하여 그중 12,500권을 서울대학교에 배정했지만, 학생들의 학습과 연구를 위한 학술 서적은 여전히 심각하게 부족했다. 또한 학교 설립 초창기와 마찬가지로 많은 학생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별도의 직업을 가져야 했다. 1952년 3월 조사에 따르면 직업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전체의 50~60%에 이르렀다. 이를 업종별로 보면 군(軍) 관계(현역 및 문관) 20%, 경찰 관계 8%, 관공서·은행·회사 32%, 미국 기관 8%, 부두 노동 7%, 개인 기업체 직원 혹은 잡무 종사자 12%, 교원·기자·약사·기타 13% 등이었다. 이 때문에 학생들의 강의 출석률은 극히 저조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1952년 3월 문교부는 각 대학에 직업을 가진 학생들의 취학을 금지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그 뒤에도 심심치 않게 학생들의 부직 문제가 논란의 대상이었다. 당시 경제 상태에서 학생들이 직업을 갖는 것을 막기는 어려웠다.

대다수 학생은 어려운 여건에서 직업을 가지면서도 학업에 열중했지만, 일부 학생은 사치와 퇴폐 풍조로 사회 문제를 일으켰다. 1952년 10월 초 문교부는 학생의 기풍(氣風)을 수습하고 선도한다는 명분으로 학생들의 풍기(風氣)에 관한 강력한 단속 조치를 폈다. 학생의 다방·요정 출입 금지, 사교 댄스 금지, 자가용차·합승차 이용 금지, 여학생의 짙은 화장 금지, 학생의 정치 운동 참가 및 정당과 사회 단체 가입 엄금 등이 그 내용이었다. 이러한 단속조치는 '부산 정치 파동' 이후 이승만 정권의 강압적 학생 통제와 함께, 일부 학생 사이에서 유행하던 사치와 퇴폐 풍조를 엿볼 수 있게 해 준다. 문

교부는 11월에도 학생 풍기를 엄중 단속하고 위반자를 처벌하도록 각 대학에 훈령을 내렸다. 이 조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느 정도 시행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경찰력을 동원하여 학생의 다방 출입 등을 단속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방은 점차 학생들에게 사치의 공간에서 생활의 공간으로 변했다. 학생들은 남포동 골목 2층의 ‘아리랑 다방’이나, 탁자나 의자가 낡을 대로 낡은 암울한 분위기의 ‘스타 다방’, 부산 역에 피난 온 ‘돌체’ 등의 다방과 술집을 중심으로 자신들만의 문화를 형성하였다. 그 문화는 ‘허망(虛妄)’과 ‘실존(實存)’이었다.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과 피난지의 가난과 위기, 정치의 무능과 부패,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 독한 알코올 기운과 전위적이고 자극적인 실존은 학생들에게 도피처가 되었다. 학생들은 사르트르와 카뮈가 대표하는 실존주의 사조에 빠져들었다. 한국전쟁 당시 싹트기 시작한 이러한 학생 문화는, 전쟁 이후 학교가 서울로 복귀하면서 본격적인 대학 문화로 성장한다.

## 2) 대학 문화와 대학가 형성

‘서울대생’이 등장하기는 했지만 정치적인 격변, 이념 대립, 학생들 사이의 이질감 때문에 서울대생이 공유하는 문화를 제대로 형성하기 어려웠다. 한국전쟁으로 학교의 존립과 학생들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대학 문화는 더더욱 형성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 갈 즈음부터 학생들 사이에서 실존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이 싹트고 서울로 돌아온 뒤 학교가 안정을 되찾으면서 대학 문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물론 1960년대까지 대학 문화라는 용어와 개념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지만, 학생들이 공유하는 생활양식과 인식, 즉 대학 문화는 한국전쟁 이후 서서히 자리를 잡았다.

식민 지배와 분단, 그리고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고유한 문화적 전통이 파괴되고 끊긴 상황에서 학생들의 관심을 끈 것은 외국 문화였다. 외국 문화는 각 부문에서 수용했다. 특히 전쟁의 상처를 경험한 학생들 사이에서 사르트르, 카뮈 등의 실존주의 철학 사조가 급속하게 퍼져 나갔다. 그리고 이러한 철학 사조와 함께 사회학, 정치학 등 새로운 서구 근대 학문도 정착했다. 이 과정에서 『문리대 학보』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외국 문화는 문학, 미술, 음악, 연극 등 예술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수용하였다. 당시 시 낭독회에서는 주로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외국 시를 낭송했고, 기리코와 몽크퐁의 회화가 학교에서 유행하였다. 캠퍼스 주변의 다방과 음악 감상실은 대학 문화의 전초 기지



로서 차이코프스키부터 멘델스존, 바흐, 브람스까지 서양 고전 음악 작곡가들의 작품을 SP판으로 들을 수 있는 곳이었다. 외국 문화 수용은 기성 문화를 부정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려는 실험 정신에서 비롯하였다.

외국 문화 수용으로 형성한 대학 문화는 개인의 낭만적 정열을 가꾸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독선적 개인주의, 퇴폐적 낭만주의와 같은 부정적 경향도 생겼다. 낭만적 대학 문화의 부정적 경향은 사회 비판 의식을 결여한 무기력한 학생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당시 학생의 모습은 1957년 『대학신문』에 실린 「현하(現下) 대학생의 지성의 방향」이라는 기획 기사에서 잘 드러난다. 이 기사에서 법과대학 황산덕 교수는 비판 정신을 결여한 학생들이 현실에 순응, 맹종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이리하여 나는 오늘의 대학생의 지성의 방향은 사회적이 아니라 개인적이며 건설적이지 아니라 후퇴적이며 건국적(建國的)이라기보다는 보다 더 망국적(亡國的)이라는 것을 슬퍼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의과대학생 이상복도 “우리의 대부분은 그러나 현실을 비판하기에 앞서 유행에의 모방과 뇌동에 기운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원인을 “전쟁과 화란(禍亂)의 세계에서 죽음 앞에 전율하고 불안 속에 생(生)을 응시하고 포연(砲煙)과 더불어 사라지는 문명의 회진(灰塵)을 바라보고 커 온 우리는 자유와 독재, 전화(戰禍)와 번영, 실존(實存)과 기계(機械)가 팽팽한 긴장 속에 대결하고 횡포와 불의와 패륜이 난무하는 사회적 현실 앞에 모든 감각이 마비됐는지 모른다. 그래서 일체의 추악(醜惡)에 대한 불감증으로 이미 주어진 역사적 현실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그 모든 것에 체념한 자세인 것 같다.”라고 분석하였다.

학생들이 무기력하고 체념적으로 변하는 경향은 거리에 다방, 당구장, 기원(棋院)이 생기고 사치스런 복장이 유행하는 사회 풍조와 관련이 있었다. 학생들은 이러한 오락에 탐닉하여 현실의 고민을 해소해 버리곤 하였다. 특히 1958년경부터 당구가 갑자기 유행하여 학생들의 대표적인 오락이 되었다. 오락과 연애에 탐닉하는 것은 일면 주체할 수 없는 현실의 고민과 불안을 잠시 잊게 해 주긴 했지만, 건전하고 창조적인 사회의식을 형성하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 많은 학생이 여전히 군복이나 작업복을 입고 다녔지만, 휴전 이후 외래 밀수품이 범람하고 국내 양복지를 대량 생산하면서 학생 복장은 점점 더 사치스러워졌다. 교복은 1, 2학년이나 입는 것이었고, 4학년 때는 양복에 벵타이를 매고 윗주머니엔 손수건까지 꽂는 정장 차림이 일반적이었다. 여학생은 검정 치마와 풀을 뺏뺏이 먹인 하얀 저고리와 흰색 목양말, 간호 장교 신발(모카신 스타일의 굽 낮은 구두)이 보편적이었지만, 가끔 맘보바지(통을 매우 좁게 하여 다리에 꼭 달라붙게 만든

바지)를 입고 파마를 한 학생들도 있었다.

그러나 낭만적 대학 문화 속에서도 학생들의 정치 사회적 비판 의식은 조금씩 성장하였다. 여기에는 이승만과 자유당 정권의 독재에 맞서 끈끈하게 대학의 양심을 지키려는 학생들의 노력이 지대한 역할을 했다. 학생 자치를 가로막는 학도호국단 폐지 요구나 이승만 대통령의 양자 이강석의 편입을 반대하는 법대생들의 동맹 휴업, 그리고 문리대생 유근일의 필화 사건 등은 대표적 사례였다. 또한 1950년대 후반에 등장한 여러 이념 서클 역시 학생들의 의식 성장에 기여하였고, 『사상계(思想界)』 등의 잡지가 간행되어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문학에서도 해외 사조의 무비판적 수용을 반성하면서 전후 문학, 혹은 민족의 울분과 감정을 그린 민족 문학의 싹이 텄다. 즉, 형이상학적, 존재론적, 낭만적이던 대학 문화가 점차 정치·사회적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대학 문화가 이렇게 이행하는 중간에 4·19 혁명이라는 전환점이 있었다.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한 학생들의 정치·사회적 비판 의식은 낭만적 대학 문화와 공존하면서 대학 문화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다.

학생들의 정치·사회적 비판 의식 성장에 학교 강의도 큰 역할을 했다. 초창기와 마찬가지로 1950년대 학생들 역시 어려운 생활 여건 속에서 학업에 임하였지만, 학사 제도를 정비하면서 학생들의 수업 열의도 점차 높아졌다. 당시 학생들에게 인기 있던 강의는 박종홍 교수의 철학 개론, 이용희 교수의 국제 정치학, 최문환 교수의 사회 사상사 등이었고, 그 밖에 이병기, 이상백, 이양하, 피천득, 유기천, 황산덕, 한태연 등의 강의에도 많은 학생이 몰렸다. 박종홍 교수는 당시 대학 문화의 중심이던 실존주의를 강의했고, 최문환 교수는 새롭게 학생들의 관심을 끌었던 ‘민족주의’를 강의했다. 특히 최문환 교수는 민족주의 강의에서, 위로부터 개혁이나 밑으로부터 개혁이 아니라 청년 학생이라는 비계급적 사회 신분 집단이 개혁 주체가 되는 인텔리 혁명을 강조했다. 민족주의를 공산주의와 동일시하던 1950년대에 민족주의와 인텔리 혁명을 강조한 강의는 파격적이었고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그 결과 학생들은 1960년 4·19 혁명에 앞장 설 수 있었다.

한편, 서울 환도 뒤 학교가 안정되면서 각 단과대학 캠퍼스 주변에는 본격적으로 ‘대학가’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대학가는 대학본부와 함께 문리과대학, 법과대학, 의과대학, 미술대학 등이 있던 동승동이었다. 당시 동승동에는 개천이 흘렀는데 학생들은 그 개천을 ‘세느 강’이라고 불렀고, 문리과대학이나 법과대학으로 들어가는 다리를 ‘미라보 다리’로 부르기도 했다. 학생들은 이런 다리에 걸터앉아 문학을 이야기했

다. 동숭동에서 학생들의 사랑을 받은 곳으로는 ‘쌍과부집’, ‘부르크집’, ‘진아춘’ 등을 꼽을 수 있다. 쌍과부집은 문리과대학 앞 의과대학 뒷담에 기대어 판잣집으로 지은 가게로, 과부 두 명이 막걸리를 파는 곳이었다. 부르크집은 문리과대학과 법과대학 사이에 있었다. 곤궁한 교수와 학생이 돈 대신 신분증을 맡겨 놓고 막걸리와 대포를 마시곤 했고, 국 한 그릇을 사서 도시락과 같이 먹기도 했다. 진아춘은 학생들이 자주 찾던 중국집으로 보통 자장면을 먹었지만 운이 좋은 날에는 탕수육에 ‘뺨갈’을 먹을 수도 있었다. 이 가게들은 단순한 주점이 아니었다. 1960년대 전반 학생 운동이 고조되었을 때 “학생 운동의 역사는 쌍과부집에서 시작하여 ‘새세대사’ (문리과대학 학생신문사)에서 끝난다.”라는 말이 나왔을 정도로, 학생들이 치열하게 고민하며 이상을 공유하고 승화하던 장이었다.

부산 가교사 시절부터 유행하던 다방 문화도 더욱 퍼져 동숭동의 ‘학림다방’과 ‘대학다방’, ‘낙산다방’ 등에 학생들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낙원동의 ‘르네상스’, 명동의 ‘돌체’ 등 당시 유명한 음악 감상실처럼, 이 다방들도 주로 서양 고전 음악을 틀었다. 학생들은 차 한 잔 시켜 놓고 음악을 들으면서 문학과 인생을 이야기하였다. 특히 문리과대학 앞 학림다방은 ‘학림제’라는 문리과대학 축제 이름을 다방 이름에서 착안할 만큼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이 다방에서 나는 철학과 정의와 사랑이 강의실보다 더 많은 결실을 얻었다 해서 영광스럽게 “제2강의실” 또는 “문리대 제25강의실”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법과대학과 미술대학 앞 낙산다방은 “미대 제5강의실”이라고 부르면서 고시 공부하다가 쉬러 오는 법대생들의 안식처 역할을 했다.

동숭동에 있지 않은 다른 단과대학 캠퍼스 주변에도 학생들의 사랑을 받는 명소들이 등장했다. 청량리에 있던 상과대학의 경우, 상과대학 본관 건물 앞 150여 평과 도서관을 따라 나 있는 1백여 평 소나무 숲길이 하늘을 가리고 있었다. 이 소나무 숲은 1959년 시작한 제1회 ‘홍릉제’ 때부터 “향상림(向上林)”이라고 불렸다. 향상림은 평소 학생들의 야외 휴게소가 되고 축제 때는 야외 음악회 장소가 되어, 상대생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 역시 청량리에 위치한 사범대학에는 ‘청량대(淸涼臺)’로 불리는 뒷동산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청량대는 사범대학 뒷동산 전체를 말하지만, 이 동산 한가운데 서 있는 바위 비석을 가리키기도 했다. 사범대학생들은 교지 이름과 축제 이름도 모두 ‘청량’이라고 할 만큼 그 이름을 사랑했다. 평화시장 옆에 있던 음악대학은 학교 주변 환경이 삭막한 편이었지만, 좁은 교정 안 분수대가 학생들의 마음을 달랠었다. 이곳에서는 야외 레슨도 있었고 학생과 교수의 가든파티도 열렸기 때문에 이곳을 거쳐 간 음대생들은 한여

름 밤에 내뿜던 분수대의 시원한 물줄기를 잊지 못했다. 공릉동의 공과대학에는 한 폭의 그림 같은 '늪'이 있었다. 이 늪에는 이름 모를 잡초가 무성히 나 있어 잔잔한 수면을 더욱 돋보이게 하였다. 바람이라도 부는 날, 갈대가 눕고 수면이 출렁이면 수식 계산과 실험 속에 사는 공대생들도 시심(詩心)에 잠기곤 했다. 5백여 평의 아담한 늪이지만 공대생들이 자부심을 느끼며 사랑하던 장소였다. 주로 시간제 가정교사나 입주 가정교사로 어렵게 생활하던 학생들은 이러한 대학가를 현실의 어려움을 잊게 해 주는 '낭만'으로 기억하였다.

### 3) 과외 활동의 시작

1950년대에 낭만적 대학 문화를 형성하면서 학업 이외의 학생 활동도 점차 활기를 띠었다. 먼저 각종 교내 기념식과 행사를 열기 시작했다. 1950년대에는 전후의 어려움 때문에 대학 문화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축제를 하기 힘들었다. 대신 학도호국단 주최로 서울대생을 포함하여 서울 시내 모든 학생이 참여하는 기념식이 자주 열렸다. 주로 국경일이나 학생의 날에 열렸던 기념식에서 군사 훈련 사열, 선도 학도 표창 등을 했다. 1955년 학생의 날에는 서울운동장에 학생 10만 명이 모여 기념식을 한 뒤 유엔중립국감시위원회 즉각 철수를 요구하는 가두 시위를 벌였다.

서울대학교 자체 기념식으로 가장 중요한 행사는 개교 기념식이었다. 개교 기념식은 한국전쟁이 계속되던 1952년만 해도 단과대학별로 간단하게 치렀다. 그러나 서울 환도 이후 1953년부터는 동승동 서울대학교 종합운동장에서 학생과 교직원 1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치렀다. 특히 1956년 개교 10주년에는 기념식뿐만 아니라, 각종 웅변대회, 전시회, 학술 강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다. 1950년대 학생들이 참여한 행사 가운데 개교 기념식과 더불어 가장 규모가 큰 행사는 '서울대학교 종합체육대회'였다. 한국전쟁 직전 시작된 대회를 1952년 11월 30일 학도호국단 주최로 부산에서 다시 연 이래, 매년 가을 서울운동장이나 효창운동장에 전교생이 모여 종합체육대회를 치렀다. 비록 규모가 크게 줄었지만 종합체육대회는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진다. 종합체육대회는 단과대학 대항 예선을 거쳐 축구, 농구, 배구 등 구기 종목의 결승 시합을 하고 응원전, 고교 대항 육상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무엇보다도 이 행사는 각 단과대학을 중심으로 생활하던 서울대생을 하나로 묶어 주는 좋은 기회였다.



그림 5-1-1 1956년 중  
합체육대회 입장식

그 밖에도 제1회 ‘서울대학교 문화제’를 1957년 6월 26일부터 7월 3일까지 열었다. 서울대학교 문화제는 학술 강연회와 함께 음악대학 교향악단과 합창단의 공연, 연극제 등 행사를 진행했는데, 특히 연극제가 학생들의 관심을 크게 끌었다. 하지만 서울대학교 문화제는 1959년 제3회 행사를 끝으로 더 이상 지속하지 못했다. 또한 1957년 11월 16일에는 제1회 ‘장기 놀이 대회’를 열었는데, 전교생과 교직원이 한자리에 모여 독주, 독창, 코미디, 고전무용, 즉석 페스티벌 등의 행사를 즐겼다. 이 행사는 1963년까지 매년 가을에 개최했다.

한국전쟁으로 발간을 중단한 학내 간행물도 다시 나왔다. 1952년 2월 연합 대학 신문으로 창간한 『대학신문』은 곧 서울대학교의 신문으로 자리매김한 후 지금까지 계속 발간하고 있다. 『대학신문』과는 별도로 각 단과대학도 신문과 학보를 발간하였다. 각 단과대학 신문으로 문리과대학의 『우리의 구상』, 『새세대』(1959년 창간), 공과대학의 『무수탑(無愁塔)』(1959년), 사범대학의 『교우(敎友)』(1957년), 상과대학의 『상대 월보』(1958년), 약학대학의 『약대 월보』(1958년), 의과대학의 『함춘(含春) 월보』(1956년)와 『News on Medicine』(1952년) 등이 있었다. 학보나 잡지로 공과대학의 『불암산(佛岩山)』(1952년 13호로 속간), 농과대학의 『상록』(1954년), 수의과대학의 『수의대학보』(1956년), 문리과대학의 『문리대 학보』(1952년), 법과대학의 『법대 학보』(1954년)를 발간했으며, 그 외에 사범대학여학생회의 『청등(淸燈)』(1957년), 상과대학의 『상대 평론』(1951년), 약학대학의 『약원(藥苑)』(1954년), 의과대학의 『의대』(1950년), 치과대학의 『저경지(儒慶

趾』(1957년 6호로 속간)와 『저벽지(儲壁趾)』(1959년 창간)도 나왔다. 또한 학과별 활동이 활발한 문리과대학은 학과 대부분이 연구지를 발간하여 학생들과 교수들이 연구 성과를 발표하였다.

그 밖의 학술 활동은 각 단과대학이 조직한 학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문리과대학은 국어국문학회, 한국우주학회, 물리학연구회, 화학연구회, 영문학회, 통계학회, 영어외교연구회, 사학회, 사회과학회 등이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법과대학은 형사법학회를 비롯하여 행정학회, 정법회, 민사법학회, 국제법학회, 공법학회, 사회법학회, 범죄문제연구회 등이 있었다. 사범대학에서는 교육학회, 사학회, 영문학회, 수학회, 생물학회, 가정학회 등이 활동했다. 상과대학은 학생연구회를 조직하였는데 이는 이론경제연구회, 상학연구회, 경영경제학회, 무역학회, 원서연구회, 통계학연구회, 재정학연구회, 농업경제연구회, 경제정책연구회, 회계학연구회 등의 연구 단체가 연합한 조직이었다. 학생연구회는 각 학회의 재정을 지원하고 『상대 평론』을 발간했으며 '전국경상대학 경제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치대연우회(硏友會)는 1958년부터 학회지 『연우』를 발간하였다. 문예 활동을 하는 학회로는 문리대문학회, 사대문학회, 서울대연극회, 의대음악부, 음대오페라단, 사대합창단 등이 있었다. 또 각 대학 운동부는 체육 활동을 했다. 특히 배구부, 정구부, 유도부, 레슬링부의 활동이 활발하였다. 각 단과대학별로 산악회를 조직하여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각 산악회를 연합한 서울대산악회를 조직하려는 시도가 몇 차례 있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종교 활동은 기독교학생회, 가톨릭학생회, 불교학생회 등이 주로 하였다. 의대무의촌진료반, 농대4H클럽, 사대농촌사회연구회, 약학대학 소모임 등은 농촌 계몽 활동을 주도하였다. 당시 가장 뚜렷하게 벌인 학생 문화 활동인 농촌 계몽 활동은 대학과 사회의 공감을 얻었으며, 이후 학생 농민 연대 활동으로 성격과 내용이 변화하면서 중요한 학생 활동으로 성장하였다.

## 제 2 절 비판 의식의 성장과 청년 문화의 영향(1960~1975년)

### 1) 종합화 이전 학생 특성

종합화 이전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1962년 설립한 '서울대학교

학생지도연구소'가 조사한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당시 학생들의 특성을 엿볼 수 있다. 1962년 1학기에 등록한 서울대학교 학생 11,127명 중 80.3%인 8,94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의 75% 정도가 도시 출신이며 31.7%는 서울이 본적이었다. 단과대학별로 보면 문리과대학, 의과대학, 공과대학은 서울 출신이 비교적 많았고, 사범대학, 농과대학, 약학대학, 법과대학 등 직업 교육을 위주로 하는 단과대학은 지방 출신이 많았다. 둘째, 학생들은 대부분 일류 고등학교 출신이었으며(10개교가 전체의 45% 차지), 공립학교 출신이 압도적(85%)이었다. 셋째, 학생들의 92.1%가 직계 존속이 보호자이지만 단과대학별로 큰 차이가 있다. 학생 보호자들의 직업은 대부분 공·상업(24.6%) 및 봉급 생활자(공무원 15.8%, 회사원 11.4%)를 위시한 도시 직업이었고, 농·어업은 약 21.1% 정도였다. 넷째, 학생들의 부직은 주로 가정교사이며, 그 수는 전체의 23.3%였다. 학생 중 22.8%가 학비를 스스로 버는 등 가정 형편이 곤란한 경우가 많았다. 다섯째, 전체 재학생의 87.8%가 남학생이고, 12.2%가 여학생이었다.

서울대학교 학생지도연구소는 설치 이후 지금까지 매년 신입생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그중 비교적 내용이 자세한 1966년, 1971년, 1974년의 조사 결과를 살펴보자. 1966년에는 신입생 2,305명 중 88.6%인 2,043명을 조사하였는데 그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이 '극히 곤란하다'는 학생이 2.8%, '상당히 곤란하다'는 학생이 20.6%이었으며, 특히 약학대학, 법과대학, 사범대학 신입생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비율이 높았다. 둘째, 학비를 전부 스스로 마련하는 학생이 15.4%, 일부를 자신이 부담하는 학생이 33.0%이며, 사범대학, 약학대학, 상과대학 순으로 자기 부담 비율이 높았다. 셋째, 정치 문제에 참여하는 것을 31.3%가 찬성하고, 22.4%가 반대했으며, 문화 참여는 68%가 찬성하며, 2.8%가 반대했다. 넷째, 가장 절실한 문제는 역시 경제 문제로 20.4%이며, 다음으로 장래 문제(15.8%), 학업 문제(10.5%) 순이었다.

1971년 신입생 3,076명 중 95.96%인 2,952명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입생의 78.9%가 도시 출신이며 47.2%가 서울에서 자랐고 35.3%는 서울이 본적이었다. 단과대학별로 보면 문리과대학 이학부·의예과·치의예과, 음악대학, 미술대학, 가정대학은 서울 출신이 비교적 많았고, 문리과대학 문학부, 법과대학, 사범대학, 상과대학은 지방 출신이 많았다. 둘째, 신입생의 83.1%가 남학생이고, 14.5%가 여학생이었다. 여학생은 50% 이상이 서울 출신이고, 남학생은 지방 출신이 훨씬 많았다. 셋째, 신입생의 과반수가 경제 여건이 하위였으나, 서울 출신이 지방 출신보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경제적 배경이 좋았다. 넷째, 신입생은 대부분 일류 고등학교 출신이며(10

개교가 전체의 58% 차지), 대체로 여고가 남고보다 편중된 분포를 보였다. 다섯째, 신입생 가운데 남학생 27%, 여학생 47.3%가 과외 공부를 한 경험이 있었다. 그리고 약 30% 정도가 재수생이었다. 여섯째, 학비를 부모나 형제가 부담하는 비율은 54.9%였고, 자기 부담 비율도 32.7%나 되었다. 서울 출신 학생들보다 지방 출신 학생의 자기 부담 비율이 높았다. 부모의 직업은 농업·광업·토건업이 남학생 22.9%, 여학생 14.6%, 상업·서비스업이 남학생 30.8%, 여학생 31.3%, 행정 사무가 남학생 30.0%, 여학생 32.1%, 의약·교육·문화가 남학생 16.3%, 여자 22% 등이었다.

종합화 직전인 1974년 신입생 3,238명 전원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입생의 출신 지역은 54.6%가 서울, 22%가 대도시, 9%가 중소 도시, 12%가 농촌이었다. 그러나 계열별로 큰 편차가 있어서, 의치예, 예능, 가정, 간호 계열은 서울 출신이 비교적 많고, 인문, 사회, 교육 계열은 비교적 적은 편이었다. 둘째, 부모 직업은 자유업이 30.36%, 공무원 15.26%, 금융 기관 및 일반 회사원 12.75%, 농림수산업 12.57% 교육 문화 10.41% 순이었다. 셋째, 가계 수입을 보면 35.92%가 저소득층이었는데, 교육, 농학, 사회 계열에서 저소득층 신입생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그런데 서울대학교 신입생의 저소득층 비율은 사립 K대(27.9%)에 비해 훨씬 높은 반면, 고소득층 비율은 7.7%로서 K대의 20.4%보다 월등히 낮았다. 학비 조달은 부모 형제가 부담하는 비율이 64.54%, 자기 부담이 21.93%, 장학금이 11.37%였는데, 교육, 인문, 사회 계열에서 자기 부담 비율이 높았다. 넷째, 신입생의 60% 이상이 졸업 후 대학원이나 해외 유학을 생각했다. 다섯째, 남학생은 85.92%, 여학생은 14.08%였다.

이 조사들은 조사 항목이 계속 달라지고 범주가 애매한 것이 많아서 비교 분석이 쉽지 않다. 그럼에도 그 속에서 1960~1970년대 서울대학생의 특징을 몇 가지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시간이 지날수록 서울 출신 학생이 증가하고 지방 출신, 농촌 출신 학생이 줄었다. 이는 서울이 급속히 팽창하면서 서울의 명문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둘째, 경제 성장 속에서도 학비를 자신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고학생들의 비율은 줄어들지 않았다. 1974년 조사에서 나타나듯이 서울의 다른 사립대학교와 비교하면 서울대학생의 경제 사정은 좀 더 어려운 형편이었다. 이는 서울대학교의 등록금이 사립대학교보다 적었던 것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셋째, 고교 평준화를 시행하기 전 학생들은 대부분 이른바 명문 고등학교 출신이었다. 넷째, 여학생 비율이 10~15% 정도에서 매우 완만하게 증가했다. 다섯째, 정치적 관심과 참여 의식이 높았다. 여섯째, 단과대학별로 가정 환경의 편차가 있었다. 이는 각 단과대학의 특성을 반영했다. 각 단



과대학별 특성은 각 단과대학의 연원과 전통의 상이, 학문적 성격 차이, 캠퍼스의 분리  
로 인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다.

서울대학교 설립 때부터 단과대학들의 연립 대학적 성격이 강했다. 총학생회 활동은  
단과대학 학생회보다 크게 부진했고, 서울대생이 같은 학교 학생으로서 동질감을 느끼  
는 때는 입학식과 졸업식, 그리고 월요일에 『대학신문』을 받아볼 때 정도라는 평이 나  
오기도 하였다.

서울대생 스스로 비판과 자기 성찰을 하는 것도 단과대학별이었다. 1963년 봄부터  
『대학신문』이 연재한 「대학가 카리카추어」가, 당시 11개 단과대학 학생들의 기질을 신  
랄하게 풍자하여 술한 반론과 화제를 불러일으킨 것은 대표적인 일화였다. 「대학가 카  
리카추어」는 문리과대학을 “성격이 없는 곳이다. 따라서 죽어도 실속도 없이 그저 연  
(然)하기를 좋아하는 게 문리대생들이다.”라고 풍자하는가 하면, 사범대학은 “꿈초 같  
은 남학생과 막대기 같은 여학생이 있는 대학”이라고 풍자했다. 법과대학은 “어떻게 살  
 것인가보다는 무엇이 될 것인가를 더 많이 생각하는 출세광의 집단”이라 비판했고, 의  
과대학에 대해서는 “히포크라테스 선서 같은 것은 이미 현대적 감각에 비추어 고리타분  
하다고 생각하는 집단”이라고 꼬집었다. 이 연재 기사는 학내에 파문을 일으켜서 『대학  
신문』에 해당 단과대학 학생의 반박 투고가 줄을 이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수 회의  
에서 관련 학생을 징계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일부 학생은 대학신문사를 습격하기까  
지 했다.

1968년 교양과정부를 설치하면서 단과대학 중심의 정체성이 점차 약화되기 시작했  
지만 1970년대에도 단대별 특징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그 결과 1973년 『대학신문』은  
「대학가 카리카추어」 연재 10주년을 기념하여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각 단과대학 학생  
들의 기질을 비판한 「대학가 만보(漫步)」라는 글을 연재하였다. 그 내용에 따르면, 대학  
중의 대학이라고 자랑하는 문리과대학은 사실 무성격의 북마전에 지나지 않고, 수재들  
의 집단인 법과대학 역시 고시에 합격하여 입신양명하는 것이 지상 목표가 된 녹슨 ‘정  
의의 종’에 불과했다. 공업 입국의 돌풍 속에서 인기가 높아진 공과대학은 그저 소시민  
자질을 일찍부터 몸에 익히는 세속 대학에 불과하고, 졸업 이후를 걱정할 필요 없는 상  
과대학은 몰인정하고 타산적인 이기주의자들의 집단이었다. 한국 교육의 본산인 사범  
대학은 교육 입국이라는 구호를 위한 상징적 존재에 머물렀고, 농촌 근대화에 앞장서야  
할 농과대학은 이념도 없고 지표도 없는 학생들의 집합소로 전락했다. 1963년과 마찬가지로  
이 연재는 큰 파문을 불러일으켰고, 『대학신문』에 이 연재물을 비판하는 반박 투

고가 이어졌다. 그러나 서울대생의 자기 의식은 이러한 상호 비판 속에서 오히려 한층 높아졌고, 1975년 종합화를 계기로 단대별 특성은 서서히 사라진다.

## 2) 민족주의 고양과 청년 문화 논쟁

1960년 4·19 혁명과 1961년 5·16 쿠데타를 거치면서 한국 사회는 많은 변화를 겪었고, 그 영향은 대학 문화에도 미쳤다. 대학은 1960년 4·19 혁명과 5·16 쿠데타, 그리고 군사 독재와 경제 개발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사회 참여 폭을 넓혀 나갔다. 1960년 4월 승리를 거둔 학생들의 기세는 끝없이 치솟았고, 자신감에 넘친 학생들의 사회 참여 의식은 더욱 높아졌다. 국민계몽대를 조직하여 '새생활 운동'을 벌인 것 등은 국가에 대한 소박한 사랑과 엘리트 의식의 발로였다. 또한 학생들 사이에서 민족주의의 뜨거운 열풍이 불었다. 당시 제3세계 국가들을 중심으로 민족주의가 고양되고 한국 사회의 분단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민족주의는 학생들의 의식을 강하게 지배하였다. 1950년대 언급조차 금기시하던 민족주의는 이제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한 번씩 고민해 보는 사상이 되었고, 그 결과 통일 운동이 급격하게 일어났다.

5·16 쿠데타의 발발로 통일 운동은 좌절했으나 학생들의 민족주의는 박정희 정권이 내세운 '민족적 민주주의'와 외형상 별 마찰을 일으키지 않았다. 하지만 1964~1965년 한일 회담을 거치면서 학생들은 정권과 크게 충돌했다. 학생들은 한일 협정 체결 및 국교 수립 후 일본의 경제적 침략을 우려하면서 박정희 정권의 저 자세 대일 외교를 맹렬히 비난했고, 일본이 과거사를 진실로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학생들의 주장은 결국 군의 무력 앞에서 억눌리고 말았지만, 학생들의 민족적 각성은 학문을 통해서, 혹은 사회 참여를 통해서 이어져 1960년대 이후 지성계의 흐름을 주도하였다. 월간 『사상계』, 『세대(世代)』, 『청맥(靑脈)』 등의 잡지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학생들의 인기를 끌었다.

1960년대 민족주의 성향의 학생들은 반일 의식이 강한 반면 반미 의식은 약했다. 1966년 서울대학교 재학생 1,314명을 대상으로 한 일본과 미국에 대한 의식 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의 45% 이상이 미국에 호의적인 태도였고 36%는 중립적 태도였으며, 부정적 태도의 학생은 10%도 되지 않았다. 이는 학생들의 18%만이 일본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40% 이상이 부정적 태도(중립적 태도는 33%)를 보인 결과와 크게 달랐다. 학생

들의 민족주의가 반미주의와 연결된 것은 1980년대 이후의 일이다.

1960년대의 술한 곡절 속에서도 기개 높았던 학생들의 사회 참여 의식은 1970년대에 들어서 굴곡을 겪었다. 그것은 4·19 혁명 이후 분출하기 시작한 사회 참여 의식을 학생들이 제대로 발전 승화할 수 없었던 데에 기인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는 점차 가중하는 학원 외부의 압력 때문이었다. 특히 1971년 10월에 내려진 위수령과 뒤이은 유신 체제는 학내 분위기를 크게 위축했다. 학생들이 약간만 모이면 “집회 허가 받아 오자.”라는 농담도 나오고 “찔리지 않으려면 학회 활동 한다고 까불지 말고 기타나 치고 술이나 먹어라.”라는 탄식이 나오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다. 암울한 정치적 현실에 의해 학생들의 사회 참여는 제약받았지만, 대신 학생들은 대학과 지식인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였다. 특히 대학과 지식인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전태일 분신 사건은 이러한 문제 제기의 계기가 되었다.

1970년대 대학 문화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이른바 ‘청년 문화’였다. 1970년대부터 통기타, 청바지, 생맥주로 대표되는 생활양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점차 유행하였다. 특히 유신 선포 후 패배주의와 무력감에 젖어든 대학가에는 통기타, 청바지, 생맥주와 함께 장발, 미니스커트, 고고 춤까지 유행했고, 양희은, 김민기와 같은 통기타 가수들과 최인호와 같은 젊은 작가들이 큰 인기를 얻었다. 사회 일각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문화를 퇴폐적이라고 비난했지만, 젊은이들의 저항적 에너지가 분출한 청년 문화로서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이들도 있었다. 청년 문화가 유행하고 ‘청년 문화론’이 등장하면서, 청년 문화와 대학 문화의 관계가 논란이 되었다. 1974년 6월 3일자 『대학신문』에 실린 청년 문화 특집 기사는 이러한 논란을 잘 보여 준다. 당시 특집 기사 서문은 청년 문화에 대한 강한 비판과 민족주의적 논조로 일관했다. 이 글은 청년 문화라는 용어가 실제 없는 도깨비에 불과하며, 사회 풍토가 매우 이질적인 외국 도식을 이 땅에 억지 적용시켜 “버터에 버무린 깍두기” 같은 것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한마디로 『대학신문』은 통기타, 청바지, 생맥주로 상징되는 청년 문화를 바람직한 대학 문화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수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은 청년 문화를 받아들였다. 1970년대 청년 문화는 1950년대 실존주의가 그랬던 것처럼 암울한 현실 속의 학생들에게 도피처 또는 저항 문화가 되었다.

청년 문화와 함께 1970년대 대학 문화에 큰 영향을 준 것은 ‘민속’이었다. 1960년대 후반부터 민속에 대한 관심이 고조하였는데, 1971년 문리과대학에 민속가면극연구회가 생겨나자 탈춤이나 판소리와 같은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여러 민

속 강좌를 개설하였고 강좌마다 학생들로 가득 찼다. 민속에 대한 관심은, 1960년대부터 고조된 학생들의 민족주의가 1970년대 한층 심해진 정치적 억압 속에서 새로운 양상으로 분출한 것이었다. 즉, 서구 문화의 대량 유입에 맞서 민족 문화를 복원하자는 취지였다. 또 집단적인 공동체 문화 공연의 장을 통해 지배 계급을 통렬히 풍자하고 유신 정권에 상징적으로 저항했다. 1975년 김상진 열사의 장례식을 민속 문화제로 기획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서울대의 민족 문화 운동은 1980년대 운동권 문화의 효시였다. 뿐만 아니라 민속에 대한 관심이 고조하는 가운데 민중에 대한 내면적 각성도 있었다. 『창작과 비평』 등 계간지들도 민속과 민중에 관한 논문들을 발표하여 학자들의 연구 의욕을 부추기고 학생들의 독서 문화를 이끌었다. 그리하여 1970년대 후반 이후 학생 사회는 ‘민중’을 논의 주제로 삼았고, 대학 문화는 민중 문화 운동의 토대가 되었다. 한마디로 1970년대 이후 대학 문화는 민족, 민주와 함께 민중을 핵심 가치로 삼기 시작했다.

### 3) 대학가 풍속 변화

1960년대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대학가에 서로 대별되는 두 가지 문화 흐름이 있었다. 하나는 심각한 생활고 때문에 생긴 허름한 ‘거지 문화’였고, 다른 하나는 1950년대 미국을 통해 들어온 사치스럽고 화려한 문화였다. 심각한 생활고에 시달려도 학생들의 캠퍼스 생활은 활기가 있었다. 사회 전반의 낮은 경제 수준으로 말미암아 학생들 역시 곤궁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없었으나, 학생들의 노력으로 4·19 혁명을 이루었다는 자부심 때문에 그들의 대학 생활은 현실보다는 이상을 추구하는 분위기가 압도했다. 덕분에 주머니에 동전 한 푼 없고 입을 것이라고는 물들인 군복 아니면 남색 교복뿐인 거지 학생들도 대학가에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었다. 후에 소설가로 입신한 당시의 어느 거지 동문은 “이 ‘거지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구김살이 없었고 의욕과 정열을 가지고 문리과대학 분위기를 주도하였다.”라고 회고하였다. 또 어떤 동문은 “하숙비를 못 내면 교정의 벤치 위에서 노숙을 하고 아침에 학우들이 등교할 때 수위실에서 이를 닦던 ‘칫솔 부대’”를 회상하기도 하였다. 반면 4·19 혁명 이후 앞 다투어 열리기 시작한 각 대학의 축제나 신입생 환영회에서는 캄보 밴드, 재즈 가수, 허스키 보이스, 트위스트가 자주 등장했고, 대중 가수들이 대학에 와서 공연도 하였다. 쌍쌍 파티, 카니발, 가면무도

회 같은 행사들은 무분별하게 서구 문화를 도입한 국적 없는 문화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대학가 풍속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나 축제는 서구 문화에 영향을 받은 행사뿐만 아니라 막걸리 잔치나 ‘주선 대회(酒仙大會)’ 등 고전적인 행사도 함께 진행하였다.

1960년대 중반까지 이성 교제 역시 발달한 열애보다 고전적인 플라토닉 러브가 대부분이었다. 같은 과 동급생 남녀 간에도 대개 말을 높였고 학생들은 대부분 미팅을 경험하지 못한 채 졸업했다. “면발치로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련히 가슴을 조이는 순정파”가 많았고, 데이트라고 해야 기껏 음악 감상실에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거나 영화 구경을 같이하는 정도였다. 4·19 혁명 때 숨진 어느 남학생은 3년 동안 같은 과 여학생을 죽도록 사랑하면서도 데이트는 물론 친밀한 대화조차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사후에 밝혀지기도 하였다. 또 1960년대 초반에는 짝사랑 수년에 분격한 어느 남학생이 여학생의 뺨을 때리자, 여학생이 곧장 교수에게 달려가 실상을 호소해 그 남학생이 정학 처분을 당한 일도 있었다.

1970년대에 들어와 대학가의 풍속은 많이 달라졌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통기타, 청바지, 생맥주로 상징되는 청년 문화가 대학가에서 유행하였다. 경제 성장의 결과 사회 전반의 경제 수준이 나아지면서 군복이나 털털한 교복 차림의 학생이 사라지고 멋진 양복을 빼입은 학생이 늘었다. 1971년 이래 암울한 정치 상황은 이러한 변화를 더욱 부추겼다. 계속되는 휴교로 학생들의 여가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학생들의 취미 활동도 다양해졌다. 대학가에 테니스 붐이 일고 카드놀이가 극성을 부린 것도 1971년 가을 이후의 일이었다. 테니스, 사격, 수영, 사진 촬영, 스키, 바둑, 서예 등의 취미 서클이나 종교 서클이 늘어나 학생 활동을 주도하기 시작한 것도 이때였다. 4·19 혁명 이후 1960년대 대학가에 충만했던 학생들의 자부심과 이상이 빛을 잃어 가는 대신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강해졌다.

몇 차례 정치적 격변이 있은 뒤 1970년대 초 캠퍼스의 가장 큰 화제와 관심사는 미팅이었다. 입학 기념 미팅, 과 미팅, 고교 동창 미팅, 휴강 기념 미팅, 종강 기념 미팅 등 명분을 갖춘 미팅뿐이 아니었다. 피보기 미팅(남자와 여자 중 한쪽 편 인원을 적게 한 뒤 짝을 못 찾은 사람들을 내보내는 방식), 줄 미팅, 고고 미팅, 그룹 미팅, 팀 미팅 등 미팅 방법도 가지가지였다. 미팅 장소로는 조용한 다방부터 운치 좋은 고궁, 심지어는 호텔 커피숍 등이 인기가 있었다. 어떤 때는 근교로 나들이를 나가 미팅을 하기도 했다. 학교 당국의 허가 없이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골치 아픈 집회 원서를 내지 않아도 되는

미팅은 교내 집회보다 훨씬 더 성황이었고, 그런 상황은 1970년대 후반까지 이어졌다.

1970년대 학생들의 풍속이 변하자 대학가의 모습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정치적인 이유로 강제 휴교를 거듭하면서 캠퍼스가 공동화(空洞化)되자, 이때부터 학생들은 시내 중심부로 이동하였다. 동숭동이나 용두동의 하숙집보다 명동의 시끄러운 다방이, 태릉이나 수원의 기숙사보다 무교동의 생맥주집이 근거지가 되었다. 변화가의 밤거리에는 서울대생이 큰 물결을 이루었고, 시내의 이름난 다방에는 군청색 서울대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많은 좌석을 차지하였다. 물론 서울대학교 주변에도 여전히 다방이 많았다. 1970년대 초에 갓 입학한 신입생들이 미팅 장소로 이용하던 ‘참스’, 점잖은 학구파 학생과 교수가 즐겨 찾던 ‘대학’, 공과대학 앞의 ‘무수’, ‘뮤직코너’, 사범대학 앞의 ‘청자’, 농과대학 앞의 ‘푸른다실’, 음악대학 앞의 ‘태을’, ‘덕수’ 등을 비롯하여 학교 주변에만 스무 곳이 넘었다. 그러나 대개 좁은 장소에 많은 사람을 수용하고 저질 음반을 크게 틀어 놓아 학생들의 불평을 많이 받았다. 그리하여 많은 학생들이 방과 후 비교적 시설이 좋은 다른 학교 근처의 다방으로 몰려가기도 하고, 교양과정부 학생 가운데는 모 여자 대학교 앞 다방에 상주하는 이도 종종 있었다. 이 과정에서 대학가 다방은 창조와 모색, 비판과 논쟁의 장(場)으로서 ‘제2캠퍼스’ 구실을 하던 이전 모습을 점점 잃어 갔다.

주점도 변하였다. 1970년대 들어서 쌍과부집, 부르크집과 같은 소주집, 막걸리집이 많이 사라졌다. 생맥주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시내 주점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도 각 단과대학 주변 몇몇 주점은 저녁이면 만원을 이루었다. 법과대학 근처와 혜화동 부근에 늘어난 주점은 모두 열 곳이 넘었는데 그중 특히 학생들이 자주 찾은 곳은 문리과대학에서 성균관대학교로 가는 길목에서 가게 이름도 없이 순댓국과 튀김을 파는 집이었다. 소주에다 한 접시에 백 원 하는 튀김이나 순대를 앞에 놓고 이야기하는 학생들과 그들 주위에 뿌옇게 깔린 담배 연기는 대학가 주점의 면모를 그대로 보여 주었다. 그 밖에 의과대학과 치과대학 예과생들은 다른 대학가에서 보기 힘든 ‘카사노바’, ‘카라반’, ‘카페무이’, ‘타박네’ 같은 맥줏집을 이용하였다. 상과대학 주변은 흥릉 가는 쪽으로 해장국집, 순댓국집이 있어서 근처 하숙생들이 밤에 냄비 하나 들고 슬리퍼 끌고 나와 안주를 담아 가곤 하였다. 수원의 농과대학 주변에는 ‘사거리집’, ‘전봇대집’, ‘파룡상회’ 등 1960년대식 주점이 학교 앞 개울가에 계속 남아 있었다. 농과대학 주변은 통행금지가 별로 철저하지 않아서 농대생들은 시간이 늦어지면 술통을 들고 근처 연습림에 가서 계속 술을 마시곤 했다. 또 한밤중에 팔달문(八達門) 현판을 떼어다 자기 집

에 붙여 놓겠다고 성문에 올라가는 객기를 부린 학생도 있었고, 밤 12시 통행금지를 넘어서 고성 망가하며 대로를 활보해서 기숙사로 돌아온 학생들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대학가 모습은 1975년 캠퍼스가 대부분 관악으로 이전하면서 추억 속으로 사라진다.

#### 4) 축제와 서클 활동의 활성화

1960~1970년대 학생 과외 활동에서 가장 활발한 분야는 축제였다. 1960년대 축제의 가장 큰 특징은 단과대학별로 독자적인 축제가 활성화했다는 점이다. 물론 1950년대에도 간헐적으로 축제가 열리기는 했지만,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는 축제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각 단과대학별로 학생회를 조직하면서 시작하였다. 축제는 보통 학술 강연회, 토론회, 발표회, 음악회, 연극 공연, 시화전, 서예전, 체육 대회, 홈 커밍 데이, 카니발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였다. 당시 카니발은 주로 가장 행렬이나 가면무도회 형식으로 진행하였고, 여기서 학생들은 폴카, 탱고, 블루스, 트위스트 등의 춤을 즐겼다.

이러한 단과대학별 축제를 통해 학생들은 단과대학 중심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갔다. 서울대생 전체가 참여하는 축제도 열린 적이 있었다. 1963년 11월 2일에는 총학생회가 '대학제'라는 이름의 축제를 창경원(현 창경궁)에서 열었다. 이날 축제는 서울대생은 물론 이화여대생 5천 명을 초청하여 쇼, 포크 댄스, 촌극, 쌍쌍 파티 등의 행사를 가졌다.



그림 5-1-2 1960년대 축제의 카니발 모습

그러나 주최 측의 준비 부족과 진행 미숙으로 혼란이 빚어지고 사회적으로도 많은 논란이 일면서 대학제는 그 후 다시 열리지 못했다.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축제 분위기는 1970년대 전반기부터 판소리나 탈춤 공연이 큰 인기를 얻고, 강연회나 토론회의 주제는 주로 민족 문화와 민족 정체성이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1970년대 대학에서 '민속'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보여 주는 사례이다.

단과대학별 축제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공과대학은 1962년부터 매년 5월 또는 6월에 '불암제(佛巖祭)'를 개최하여 1974년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하였다. 공과대학은 봄철에 열리는 불암제 외에 1969년부터는 가을철에 '공대 종합 예술제'를 개최하였다. 농과대학은 1961년 이래 매년 5~6월에 '상록(常綠) 문화제'를 개최하였다. 문리과대학은 '학림제(學林祭)'를 1962년부터 1970년까지 8회 개최하였다. 3회 학림제까지는 5월에 열었으나, 1965년 학원 사태로 10월로 연기한 것을 계기로 그 후 10월 또는 11월에 열었다. 미술대학은 1968년부터 '학예제(學藝祭)'를 개최하여 1973년까지 4회 열었다. 법과대학은 1961년 '학술제(學術祭)'를 시작하였는데, 1965년에 학원 사태로 학술제를 열지 못한 뒤 1966년 '낙산제(駱山祭)'로 개칭하면서 내용이 다양해졌고, 1974년까지 11회 개최하였다. 사범대학은 1961년부터 '청량제(淸涼祭)'를 시작하여 1974년까지 11회 개최하였다. 상과대학은 '홍릉제(洪陵祭)'를 1959년부터 시작했는데 4·19 혁명 이후 상과대학학생회가 주관하여 1974년까지 모두 13회 열었다. 약학대학은 1963년부터 '함춘제(含春祭)'를 시작했는데 10월 10일 '약의 날'을 기념하여 매년 10월에 열었고 1973년까지 모두 9회 개최하였다. 음악대학은 1968년 이전까지 축제를 단지 '음대 페스티벌'이라고 불렀으나 그 해에 명칭을 공모한 끝에 '예악 축전(藝樂祝典)'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예악 축전'은 1968년 시작한 이래 1974년까지 4회에 걸쳐 열렸다. 의과대학은 '함춘 축전(含春祝典)'을 1964년부터 1974년까지 6회 개최했다. 치과대학은 '저경제(儲慶祭)'와 '6·9제(祭)'를 개최하였다. 저경제는 1963년 처음 시작한 이래 매년 10월이나 11월에 열었고, 6·9제는 6월 9일 구강 보건일을 기념하여 1969년부터 1학기 축제로 개최하였다. 가정대학은 '아람제'를 1970년 이래 매년 1학기에 개최하였다. 교양 과정부는 1968년 설립되던 해에 '학예술제(學藝術祭)'를 개최했는데 1969년 '햇불제'로 이름을 바꿔 이후 1974년까지 5회 열었다. 단과대학별 축제는 1970년대 종합화 이전까지 지속했고, 일부 단과대학 축제는 종합화 이후에도 한동안 계속했다.

축제의 활성화와 더불어 1960년 이후 학생 서클 활동도 이전에 비하여 매우 활발했



다. 그것은 과외 활동 단체 증가뿐만 아니라, 4·19 혁명 뒤 각 학생 단체 활동이 크게 활기를 띠었다는 점과 통한다. 1960년대에는 정부나 학교 당국이 학생 서클 활동을 강하게 규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 참여를 비롯한 학생 활동 대부분을 공식적인 학생 단체가 주도했다. 1963년부터 학생 단체 등록제를 실시하였는데, 단체 등록 수는 1964학년도 171개, 1967학년도 232개, 1969학년도 194개, 1971학년도 204개였고, 1972학년도에는 89개로 줄었다가 1974학년도에 다시 220개로 늘었다. 1972년에 학생 단체가 급격하게 준 이유는, 1971년 학칙 개정을 계기로 학생 과외 활동을 학교 당국이 적극적으로 규제했기 때문이다. 개정 학칙은 “과외 활동은 지도 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하며 교육 수행과 학내 질서 유지에 배치되는 활동은 할 수가 없다.”고 규정하였다. 또 1972년 학생 활동이 부진한 것은 그 해 문리과대학, 법과대학, 사범대학, 농과대학 등에서 학생 회를 구성하지 못한 것과도 관련이 있다. 한편 학생 단체 소속을 보면 1974년 등록 단체 220개 중 총학생회 산하 단체가 22개인 데 반해, 각 단과대학 학생회 산하 단체는 198개나 되었다. 단과대학 중에는 농과대학이 제일 많아 41개였고, 미술대학이 4개로 가장 적었다. 단체 성격에 따라서 분류하면 학술 단체가 43개, 봉사 단체가 14개, 종교 단체가 32개, 체육 단체가 57개, 그리고 교양 친목 단체가 74개였다.

학내 언론의 경우 1965년 이전까지는 각 단과대학별로 신문을 발간하였으나 서울대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대학신문』의 발전으로 그 중요성이 점차 감소해 대부분 단과대학에서 발행하는 학보로 통합하였다. 각 단과대학 신문사는 각기 학생회 조직에 소속하였으나, 편집권 일체를 편집 위원이 맡아서 독립된 활동을 할 수 있었다. 전공 논문, 교양 논문, 문예물 등을 수록한 각 단과대학 학보는 당시 단과대학 학생들의 의식과 생활을 잘 반영하였다. 또한 문제의식이 강한 학생들이 학보에 많이 들어가 단과대학 학보사는 학생 활동의 중심지가 되기도 했다.

각 단과대학 간행물의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공과대학은 학내 신문인 『무수탑(無愁塔)』을 1960년 6호 이후 『서울 공대』로 이름을 바꾸어 학보 『불암산(佛巖山)』과 함께 발간하였고, 1965년 신문을 학보에 통합하여 『서울 공대』라는 학보를 발간하였다. 농과대학은 학내신문인 『농대 신문』과 학보인 『상록(常綠)』을 발간하다가, 1966년 이후 『상록』이 『농대 신문』을 통합하였다. 문리과대학의 경우 1959년 창간한 신문 『새세대』가 자연 과학보다 인문 사회 과학 계통에 치중하고 사회 현실에 깊은 관심을 보였는데, 1962년 5월 필화 사건, 그 해 9월 휴간 처분 등 수난을 겪다가 1964년 11월에 62호를 끝으로 정간하였다. 『The Academy Tribune』도 비슷한 성격의 신문으로 4권 4호까지

발간하고 1964년에 휴간하였다. 1967년 11월 종합 교양지 『형성(形成)』을 창간하였는데 학생 논단의 역할을 하면서 계간으로 발전하였지만, 7권 2호까지 발간하고 문리과대학 해체와 동시에 끝을 맺었다. 학술지 성격을 띤 『문리대 학보』는 1952년 창간 이래 1974년 통권 29호까지 나왔다. 미술대학은 1966년 6월 『미대 학보』를 창간했고 이후에도 계속 나왔다. 법과대학은 1954년 이래 계속 내던 『법대 학보』와 『법대 신문』을 통합하여 1963년 『Fides』를 창간하였다. 『Fides』는 연 2회 발간했다. 사범대학은 학내 신문인 『교우(敎友)』를 『사대 월보』로, 이것을 다시 1961년 『사대 신문』으로 개칭하였다. 『사대 신문』은 1962년 50호로 중간하고 『청량원(淸涼苑)』에 통합하였다. 『사대 뉴스』는 1961년 4월 창간해서 주간으로 발간했는데, 1973년 『사대 문화(師大文化)』로 개명해서 1974년 332호까지 발간했다. 1963년 창간한 영자 신문 『The Collegian』은 1965년 『청량원』에 통합하였다. 상과대학은 『상대 신문』을 1958년 창간한 뒤 충실히 발행하였고 영자 신문 『The Economic Frontier』도 발간하였다. 1952년 창간한 학보 『상대 평론』도 1975년 1월 35호를 내고 중간할 때까지 높은 수준의 학문적 성과를 담아냈다. 약학대학은 1954년 창간한 학보 『약원』을 계속 발간하였다. 의과대학은 1950년부터 발간한 학보 『의대』를 6호까지 발간하고 1967년에 『함춘원(含春苑)』으로 속간하였다. 『함춘원』은 격년간으로 발행했는데 1974년 11호까지 났다. 치과대학은 『치대 신문』을 1963년 창간하였고 1967년 2월 『치원(齒苑)』이란 학보로 발전시켰다. 의예과는 1973년부터 『이바둑』을, 치의예과는 1961년부터 『상아(象牙)』를 간행하였고, 간호학과는 학보 『간호학과』를 1971년 8월 창간하였다. 가정대학은 학보인 『아람』을 1973년 4월 창간하였다. 교양과정부는 학보 『향연(嚮宴)』을 1969년 2월 창간하지만 1975년 2월 7호를 마지막으로 교양과정부 폐지와 함께 폐간하였다. 음악대학은 『음대 학보』를 간행하였으나 1973년에 6호를 낸 후 발간하지 않았으며, 총학생회는 1968년부터 교양지 『여울』을 발간하여 1974년 6호까지 났다. 이런 단과대학별 간행물은 단과대학별 축제와 더불어 1975년 종합화 이전에 각 단과대학을 중심으로 발전한 대학 문화의 모습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

### 제3절 대항문화(Counter-Culture)와 공동체 문화의 강화(1975~1990년)

#### 1) 관악 세대의 등장

1975년 서울대학교 종합화와 관악 캠퍼스 이전은 학생 생활을 크게 변화시켰다. 우선 같은 해 2월 발표한 ‘서울대학교설치령’ 개정안에 따라 기존 단과대학들을 새롭게 재편성하였다. 문리과대학과 상과대학을 폐지한 대신, 개별 학과를 헤쳐모아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경영대학을 신설했다. 이러한 재편에 대해 문리과대학과 상과대학은 선후배를 망라하여 완강한 반대했으나, 단과대학은 재편성되었다. 단과대학을 재편하고 캠퍼스를 분주히 이전하는 가운데 학생들은 혼란을 겪어야 했다. 상과대학을 전신으로 한 경영대학은 비교적 빨리 안정을 찾았으나,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은 문리과대학 시절을 동경하며 쉽게 안정되지 못했다. 학생들이 아직 정을 붙이지 못한 관악 캠퍼스는 오후 늦은 시간이면 더욱 스산했다. 황량함을 느낄 만큼 널따란 공간에 교문마저 없이 비슷비슷한 건물들이 덩그러니 서 있는 관악 캠퍼스의 모습은 마치 외딴 섬과 같았다. 그래서 당시 『대학신문』에는 “저녁이면 텅 빈 캠퍼스 …… 면학에 장애”, “한산한 하오의 캠퍼스 …… 활기 되찾아야” 등의 제목을 단 기사가 종종 등장했다. 반면 허허벌판에 학교를 마주보고 세워진 동양 최대의 파출소는 소문으로만 퍼진 캠퍼스 이전의 정치적 의도를 짐작케 했다.

종합화와 관악 캠퍼스 이전은 서울대학교가 연립 대학 체제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종합 대학으로 발전하는 계기였지만, 그에 따르는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우선 각 단과대학을 모두 하나의 캠퍼스에 모아 놓음으로써 각 단과대학은 점차 개성을 잃었다. 또한 1974년부터 시작한 계열별 신입생 모집으로 구심점을 잃은 학생들은 개별화하고 분자화했다. 관악 캠퍼스의 획일적인 건물들은 개성을 잃은 채 개별화한 학생들의 모습을 그대로 상징하였다. 당시 『대학신문』은 관악 캠퍼스를 가리켜 “회색빛의 우중충한 교도소”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게다가 관악 캠퍼스 근처로 아직 거처를 옮기지 못한 학생들 대부분은 한 시간이 넘게 버스를 타고 통학해야 했다. 종합화 이후 관악 캠퍼스에서 학교를 다니기 시작한 이른바 ‘관악 세대’는 학교 생활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관악 캠퍼스 생활이 한 해 두 해 이어지면서 학생들은 서서히 적응해 갔다. 학생들은 먼저 관악 캠퍼스 곳곳에 새로운 이름을 지어 붙였다. 학생들이 시국 토론이나 집회를

위해 자주 모이던 도서관과 본부 사이의 넓은 잔디와 계단은 ‘아크로폴리스’ 라고 이름을 붙였다. 이후 아크로폴리스는 ‘아크로’ 라는 약칭으로 불렸고, 서울대학교 학생 운동과 학생회 활동의 중심이자 상징이 되었다. 인문대학 옆에 만든 인공 연못은 조선 시대 그 지역 지명인 자하(紫霞)골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자하연(紫霞淵)’ 이라고 불렀고, 그 위에 놓인 콘크리트 다리는 ‘오작교(烏鵲橋)’ 라고 불렀다. 사범대학 뒤의 넓은 잔디밭은 ‘버들골’ 이라고 불렀고, 본부에서 교문 쪽으로 가는 길에 있는 잔디밭(현재 규장각 옆 잔디밭)은 감나무가 옛 모습대로 남았다 해서 ‘감골’ 이라고 불렀다. 감골 아래에는 동구(洞口)를 지키던 수백 년이 된 느티나무가 아스팔트 포장 도로 한복판에서 있었는데 아깝게도 천수를 다하지 못하고 말라 죽었다. 하지만 느티나무는 1983년 4월 4일 서울대학교 교목이 되어 서울대학교의 역사로 부활하였다.

종합화 이후 학교를 다닌 관악 세대는 이전 세대와 몇몇 부분이 달랐다. 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1975년 서울대학교 학생지도연구소에서 명칭 변경)에서 매년 조사한 신입생 특성은 관악 세대의 특징을 잘 보여 준다.

위 연구소의 통계를 바탕으로 관악 세대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표 5-1-1>에서 볼 수 있듯이 1960년대 서서히 증가한 신입생 중 여학생 숫자는 1970년대에 15% 정도에서 정체했다. 관악 세대도 여전히 남학생이 다수였다. 둘째, <표 5-1-2>에서 볼 수 있듯이 서울 거주 신입생 비율은 1977년 이후 계속 하락하였다. 이는

<표 5-1-1> 신입생 성비(1969~1979년)

(단위: 명, %)

연도	구분		남학생		여학생		전체
	숫자	비율	숫자	비율	숫자	비율	
1969	2,110	85.15	368	14.85			2,478
1970	2,080	84.35	386	15.65			2,466
1971	2,423	85.14	423	14.86			2,846
1972	2,642	85.64	443	14.36			3,085
1974	2,782	85.92	456	14.08			3,238
1975	2,432	85.15	424	14.85			2,856
1976	2,255	86.37	355	13.60			2,611
1977	2,834	88.12	382	11.88			3,216
1978	2,831	85.89	465	14.11			3,296
1979	2,851	85.62	479	14.38			3,330

출전: 홍대식, 1979, 「1979학년도 서울대학교 신입생의 특성」, 『학생 연구』 제16권 제1호, 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이하 <표 5-1-2>, <표 5-1-3> 출전도 같다.

〈표 5-1-2〉 신입생 주소지 상황(1975~1979년)

(단위: %)

구분 \ 연도	1975	1976	1977	1978	1979
서울	62.7	66.1	61.3	50.9	49.4
부산	8.9	9.0	7.3	7.0	9.3
경기	4.9	4.5	6.1	6.0	4.7
강원	1.4	1.1	3.1	3.7	3.4
충북	1.4	1.4	1.6	2.3	2.3
충남	3.6	3.5	3.1	4.6	5.4
경북	6.1	4.6	6.9	7.8	8.6
경남	3.3	2.5	3.0	5.4	5.9
전북	2.7	3.3	3.5	5.2	5.9
전남	4.5	3.6	3.5	5.1	4.4
제주	0.5	0.3	0.6	1.0	0.7

〈표 5-1-3〉 생활 수준 지각(知覺) 상황(1974~1979년)

(단위: %)

구분 \ 연도	1974	1976	1977	1978	1979
충분여유		0.9	0.4	3.4	2.9
여유	7.7	7.9	8.9	36.7	49.7
현상유지	56.4	50.2	52.7	31.5	35.8
곤란		23.9	22.6	23.1	8.8
빈곤	35.9	11.5	13.9	5.1	2.3
무응답	-	5.6	1.5	0.2	0.5

1974년 서울과 부산에서 실시한 고교 평준화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고교 평준화 전에는 지방 학생이 일찍부터 서울로 이주하여 서울의 명문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 서울대학교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지만, 고교 평준화를 실시하자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오히려 신입생 가운데 당시 고교 평준화를 실시하지 않았던 중소 도시의 명문 고등학교 출신 학생들의 숫자가 늘었다. 물론 관악 세대 역시 서울 거주 학생의 입학 비율은 매우 높은 편이었다. 셋째, 〈표 5-1-3〉에서 보듯 1978년 이후 신입생의 생활 수준도 조금씩 나아졌다. 이는 1979년 2차 오일 쇼크 전까지 1970년대 후반 한국 경제가 연 평균 10% 이상씩 경제가 성장한 것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 학생들의 경제 형편이 나아지면서 학비의 자기 부담 비율도 1973년 23.7%에서 1979년 11.1%로 줄어들었다.

반면 학비를 부모나 형제가 부담하는 비율은 1973년 63.6%에서 1979년 86.3%로 증가했다.

이러한 경향은 1980년대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서울 거주 신입생의 비율은 계속 하락하여 1982년 47.2%, 1983년 44.8%, 1984년 41.6%까지 떨어졌으나, 1980년대 후반에는 계속 40% 정도를 유지했다. 학비의 자기 부담 비율도 1980년대 내내 10% 내외를 유지했다. 단, 신입생 중 여학생 비율은 1980년 14.1%에서 1981년 16.3%, 1982년 21.4%, 1983년 24.5%로 증가한 뒤 1980년대 내내 20~25%를 유지했다. 이는 여학생들의 학력이 꾸준히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1980년 '7·30 교육 개혁 조치'로 1981년부터 본고사를 폐지하고 학력고사와 고교 내신 성적만으로 입시를 치른 것이 상대적으로 여학생에게 유리했기 때문이다.

1980년대 서울대생들의 특성은 다른 대학교 학생들과 비교하면 더 잘 드러난다. 1987년 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가 서울대학생과 연세대학생, 고려대학생을 비교 분석한 조사 결과를 보면, 첫째, 서울대생의 46.0%가 서울 출신으로 연세대학교(61.7%)나 고려대학교(53.0%)보다 낮은 비율이었다. 둘째, 서울대생 가정의 38.8%가 하층으로 지방대생(평균 50% 이상)이나 고려대생(44.2%)보다는 낮았지만, 연세대생(21.7%)보다는 높았다. 셋째, 서울대생의 65%가 중고생 입시 지도를 부업으로 삼았는데, 이는 연세대생(55.1%)이나 고려대생(45.8%)보다 훨씬 높은 비율이었다. 넷째, 1986년 서울대생의 5.8%가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40.8%가 소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51.8%는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 연세대생이나 고려대생도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다섯째, 당시 대학생들은 서울대생에 대한 이미지로 '유능하다'(62.6%) '합리적이다'(47.6%)라는 긍정적 항목과 함께, '이기적이다'(57.2%), '독단적이다'(57.2%)라는 부정적 항목을 많이 선택하였다. 이는 1980년대뿐만 아니라 학교 설립 이후 지금까지 일반인들이 서울대생을 바라보는 가장 보편적인 이미지이다. 하지만 종합화 이후 1980년대 서울대생들은 이기적이고 독단적이라는 이미지를 넘어 강력한 운동권 문화와 공동체 문화를 만들었다. 이를 기반으로 대학 문화는 한국 사회의 주류 문화에 맞서는 대항 문화(Counter-Culture)로 성장하였다.

## 2) 운동권 문화와 의식화

종합화 이후 1980년대 대학 문화의 가장 큰 변화는 학생 운동이 활성화하고 대중화하는 과정에서 운동권 문화가 급격히 확산된 점이다. ‘운동권’이라는 용어가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쓰였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단, 1970년대 중반 이전까지 운동권과 비운동권의 뚜렷한 구분은 없었다. 주로 단과대학을 중심으로 학생 운동을 했기 때문에 운동권과 비운동권의 구분보다 단과대학의 분위기와 공동체적 유대가 더 중요하였다. 또한 유신체제 이전까지 학생 운동이 상대적으로 덜 탄압받았기 때문에 운동을 주도하는 학생들은 일반 학생들과 섞여 비교적 자유롭게 활동하였다. 그러나 유신체제 선포와 긴급조치 발동 이후 학생 운동에 대한 탄압이 심해지면서 학생 운동의 환경은 조금씩 바뀌었다. 특히 1975년 긴급조치 9호가 발동한 뒤 경찰은 노골적으로 대학에 상주하며 시위 기미가 보이는 즉시 시위 주동자는 물론 단순 가담자까지 연행하여 처벌하였다. 학생회를 해체하고 부활한 학도호국단은 공개적인 학생활동을 위축시켰다. 유신체제의 가혹한 탄압에 맞서 민주화 운동을 주도하는 학생들은 보다 치열하고 은밀하게 활동했다. 이들은 유신체제를 타도하기 위해 학내를 넘어 다른 학교나, 종교계, 재야인사 등과 연대하였다. 이 과정에서 제적과 구속을 두려워하지 않고 학생 운동, 민주화 운동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운동권이라 불리기 시작했다. 한마디로 운동권은 억압적 독재 시대의 산물이었다.

1980년대 들어 학생 운동이 활성화되고 대중화되면서 운동권 문화가 대학 사회에 급속하게 확산되었다. 그러나 운동권 문화는 단순히 이들 운동권만의 문화를 의미하지 않았다. 체제에 대한 저항과 사회 변혁을 지향하는 대항 문화 전반을 의미했다. 운동권이든 비운동권이든 1980년대 학생이라면 누구나 운동권 문화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운동권 문화가 확산되면서 대학 문화는 대중 문화와 구별되는 독특한 정체성을 형성했다.

특히 민중 가요라고 불린 학생 운동 관련 노래는 운동권 문화의 확산에 큰 역할을 했다. 당시는 몇 사람만 학내에 모여 있어도 즉시 경찰이 연행했기 때문에 정치 토론이나 연설을 할 시간이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래는 학생 운동의 가장 중요한 선전 수단으로 등장했다. 초기에는 뚜렷한 노래 운동 집단이 없어서, 1960년대부터 부르던 「해방가」, 「정의가」 같은 소위 「데모 노래」와 「우리 승리하리라」, 「오 자유」 등 복음 성가를 구전했다. 그러다가 1970년대 후반 가수 김민기의 「친구」, 「아침이슬」, 「금관의 예수」, 「상록수」와 같은 노래가 암울한 시대의 아픔과 운동권 학생의 결의를 상징하는 노래로

사랑받았다. 박정희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맞이한 1980년 ‘서울의 봄’에는, 1970년대 후반까지 소수만 알고 있던 운동권 노래가 일반 학생에게까지 퍼져나갔다. 이때 모든 집회를 노래 배우기로 시작하면서, 노래가 정치적으로 유용한 수단이라는 인식이 더욱 확고해졌다. 1977년 결성한 노래패 ‘메아리’를 비롯한 각종 노래 서클들은 스스로 활동이 현실적으로 순수 예술 운동이 아닌 학생 운동의 일부임을 인정하면서, 건강한 노래 보급과 효과적인 학생 운동 이념 전달에 관심을 가졌다. 그들은 주로 전문 민중 가요 집단의 창작곡이나 노동 가요, 민요, 개사곡 등을 대중화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그 결과 민중 가요는 시위나 집회뿐만 아니라 술자리와 같은 학생들의 일상에서도 흔히 들을 수 있었고, 1980년대 후반에는 ‘노래를 찾는 사람들’과 같은 민중 가요 집단이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더욱 대중화했다.

운동권 문화가 확산되면서 대학의 문화 예술도 민주, 민족, 민중이라는 학생 운동의 이념을 받아들이며 사회 변혁을 위한 정치 투쟁의 최전두에 섰다. 문화 예술은 정치 투쟁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도구였다. 집회나 가두시위와 같은 정치 투쟁 과정에서 학생들이 만들어 낸 문화 예술은 학생들의 투쟁 결의를 다지고 연대 의식을 고취하는 데 크게 일조하였다. 그 당시 대학의 문화 예술에서 개인적 취향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언제나 사회의 모순을 표현하고 그것의 해결 방향을 대중들에게 선전, 선동하는 목표가 우선이었다. 당시의 작품은 대개 강한 전형성을 띠었다. 노래는 마이너 화성 중심의 행진곡풍으로 많이 만들고 불렀다. 연극은 클라이맥스에서 붉은 깃발이 심심치 않게 올라갔다. 7채에서 6채로 이어지는 마당극의 클라이맥스, 탄압을 뚫고 전진하는 노동자를 그린 소설, 육체노동으로 그을리고 울퉁불퉁해진 이들의 땀과 투쟁을 담은 사진과 그림 등 장르마다 거의 비슷비슷한 전형적 표현을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문화 예술을 둘러싼 많은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편 운동권 문화의 전파는 소위 ‘의식화’ 과정과 밀접한 관련을 맺었다. 학생들은 의식화를 통해 정치적으로 각성하고 학생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데, 이때 운동권 문화는 의식화의 중요한 배경이자 결과물이었다.

신입생 의식화는 입학 전후 보통 ‘녹두거리’의 식당이나 주점에서 열리는 ‘신입생 환영회’부터 시작했다. 학과, 서클, 동문회 등에서 주최하는 신입생 환영회는 신입생과 재학생을 연결하는 첫 번째 관문이었다. 무엇보다도 선배들의 대학 생활 경험과 지식은 신입생들을 대하는 선배들에게 실질적인 권위를 부여했다. 특히 1980년대는 사회 과학의 시대라고 불릴 정도로 사회 과학에 대한 학식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폭넓은 독서가



필요한 사회 과학을 신입생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았고, 그만큼 선배의 가르침과 조언은 신입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신입생 환영회 이후 열리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선배 동기와 일체감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였다. 이 자리에서 선배들이 제안하는 여러 주제에 대해 발표와 토론을 했고, 밤에는 어김없이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다같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다. 앞서 언급한 민중 가요와 같은 노래들은 신입생들에게 생소하면서도 호기심을 자극하는 대학만의 독특한 문화였다. 「임을 위한 행진곡」, 「선봉에 서서」와 같이 포크송 멜로디에 전투적인 가사를 붙인 노래, 대중가요 가사를 정치적으로 또는 풍자적으로 바꿔 부르는 노래, 「권주가」, 「사랑가」같이 집단적으로 부르기 좋은 노래 등 많은 노래가 신입생의 귀를 사로잡았다. 이후 학교에서, 술집에서, 거리에서 이런 노래들은 대학생의 정체성을 가장 잘 표현하는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산타마리아춤’, ‘해방춤’, ‘4박자춤’ 등의 춤 역시 단순한 유희의 의미를 넘어 서로 몸을 부대끼며 하나가 되는 ‘대동(大同)’의 의미를 담았다.

신입생이 정치적으로 성장하는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선배들과 함께하는 세미나와 각종 집회·시위였다. 신입생들은 입학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고등학교 때까지 배운 지식이 매우 단편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동안 알지 못했던 사회 문제에 눈을 떴다. 그 다음 단계로 선배들이 권하는 책들을 읽고 토론했다. 이 책들은 고등학교 때까지의 사고방식을 무화(無化)하고 새로운 역사관과 사회관을 갖게 하는 시각 교정용 교양 도서였다. 『해방 전후사의 인식』, 『전환 시대의 논리』, 『중국의 붉은 별』 등은 당시 신입생들이라면 꼭 읽어야 할 필독서였다. 교양 도서를 읽으면서 충격을 받은 신입생들에게 선배들과 함께 사회 과학, 역사, 철학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세미나는 큰 영향을 미쳤다. 세미나는 과 학회, 서클, 동문 모임 등에서 광범위하게 행해졌다. 커리큘럼은 보통 신입생 교육을 위해 만들었는데, 사회 과학 공부와 사회 문제 인식에 도움을 주는 도서를 선택했다. 1학년 1학기 커리큘럼은 지식인 문제, 한국 근현대사 문제가 주이고, 2학기에는 변증법적 유물론과 이에 입각한 경제사 등을 공부했다. 『세계 철학사』, 『민중과 지식인』, 『해방 전후사의 인식』, 『한국 경제의 전개 과정』 등이 세미나용 주요 도서였다.

암울한 사회 현실은 책이나 세미나보다도 더 결정적인 의식화 계기였다. 군사 독재 정권의 비민주적 정치, 민족 분단 아픔과 반공이데올로기의 억압, 소외받은 민중들의 열악한 삶 등은 신입생들을 자연스럽게 시위 현장에 서게 했다. 4·19 혁명 관련 집회

이후 5월 내내 많은 신입생들이 시위에 참여하였다. 처음에 신입생들은 이러한 시위에 두려움과 거부감을 가졌지만, 눈앞에서 벌어지는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은 학생들의 분노와 결의를 자극하였다. 시위 중 나오는 구호나 노래는 학생들이 실천해야 할 바를 분명하게 전달했다. 이렇게 1학기를 보낸 신입생들은 방학 기간 동안 ‘농활’과 ‘MT’, ‘TS’(합숙세미나) 등을 하면서 고등학생의 정체성을 완전히 벗고 의식화된 대학생이 되었다. 물론 모든 학생들이 다 의식화한 것은 아니었지만 의식화 과정을 통해 운동권 문화는 대학 문화의 주류로 자리 잡았다.

### 3) 공동체 문화의 활성화

관악 캠퍼스 이전 뒤 단대별 특성이 점차 사라지면서 서울대생의 정체성 형성이 비로소 가능해졌다. 서울대생의 정체성 형성 과정에서 공동체 문화가 큰 역할을 했다. ‘공동체’ 개념은 1970년대 민속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특히 노래패, 사물놀이패 등에서 나타나는 ‘패거리’ 개념은 집단과 공동체를 강조하는 공동체 문화의 특징을 잘 보여줬다. 이처럼 전통 문화의 집단성에서 출발한 공동체 문화는 이후 운동권 문화와 결합하여 1980년대 대학 문화의 핵심 요소가 되었다.

종합화 이후 활성화한 공동체 문화의 모습은, 기존의 단과대학별 축제가 사라진 후 서울대생 전체가 참여하는 축제가 ‘대동제’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사실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종합화 첫 해인 1975년 봄에는 시위 때문에 장기간 휴강 사태가 벌어져 축제를 열지 못했다. 하지만 10월에는 개교 기념일을 맞이하여 현재 축제의 직접적인 모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 제1회 ‘대학 축전’을 관악 캠퍼스에서 개최하였다. 1975년 부활한 학도호국단이 축제를 주최했으며, 학술 행사와 음악제, 민속제, 예술 행사, 전시회, 모의 국회, 형사 모의 재판, 카니발, 체육 대회 등 낮익은 행사가 많이 열렸다. 일부 행사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대학 축전의 마지막 밤에는 관악 캠퍼스 대운동장에서 동양 최대의 고고 파티를 벌였다. 이를 두고 대학 축전이 “고고와 블루스만의 축제, 모든 행사는 오직 카니



그림 5-1-3 제1회 대학 축전 포스터

발을 위한 보조적 기능만을 수행한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물론 당시까지 관악 캠퍼스로 이전하지 않았던 단과대학들은 단과대학별 축제를 계속했다.

1976년 가을 제2회 대학 축전은 개교 30주년 기념행사로 기획하여 화려하게 치렀다. 전야제에서 그룹사운드 아홉 팀이 릴레이 공연을 했고, 각종 행사를 일주일 동안 벌였다. 특히 연극제와 민속제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높았다. 마지막 날에 운동장을 가득 메운 학생들과 연인들의 쌍쌍 파티와 카니발이 있었다. 그러나 1977년 제3회 대학 축전은 학내 사태로 휴업 조치가 내려져 중지되었고, 1978년 제4회 대학 축전은 민속제, 대동 놀이, 심포지엄, 토론 대회 등을 제외하고 학도호국단이 독단으로 소비, 향락적 행사를 주관하여 학생들에게 외면을 당했다. 1979년 제5회 대학 축전은 일정에 탈춤 공연이 다시 들어갔으나 농악 공연은 학교 당국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또 이때부터 바깥에서 놀이하는 ‘마당극’이 축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 탈춤 공연과 마당극은 현실에 대한 풍자를 통해 학생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제5회 대학 축전은 ‘10·26 사태’ 이후 휴교령으로 마지막 날 행사인 카니발을 하지 못한 채 중단하였다. 1977년과 1979년에는 여울 가요제, 미스 여울 선발 대회, 페스티벌 등으로 구성된 ‘여울제’를 학도호국단 여학생부의 주최로 열기도 하였다.

1980년은 ‘서울의 봄’과 함께 찾아왔다. 1980년 봄에는 일주일 동안 ‘암흑을 밝히고 일어난 사월의 햇불을 되새기며’라는 주제로 4·19 기념제가 열렸다. 10·26 사태 뒤 민주화 열기 속에서 6년 만에 구성된 총학생회는 기존의 대학 축전과 같은 형식적인 행사가 아닌 알찬 기념제를 열었다. 1975년 자결한 김상진을 추모하는 강연, 장례식, 진오 귀국을 벌였으며, 탈춤반, 농악반, 연극반이 공동으로 기획한 ‘관악극’, 메아리의 4·19 노래 발표회, 마당극 ‘녹두꽃’ 등을 공연하였다. 그러나 5·17 쿠데타 뒤 휴교령과 함께 학도호국단이 다시 들어서고 서클 등록을 허가제로 바꾸면서 가을의 대학 축전은 중지되었다.

1981년은 축제 준비 과정에서 큰 진통이 있었던 해였다. 1981년 5월 ‘학예제’라는 이름의 축제를 계획했다. 이 과정에서 학도호국단과 여러 서클이 대립하였다. 학도호국단의 축제 주도에 반발한 서클들은 자율적으로 ‘학예제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학도호국단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서클들이 학예제 참가를 보이콧하자 학예제는 무산되었다. 학도호국단과 서클들은 10월 개교 35주년 대학 축전 준비 과정에서 준비위원회 구성을 둘러싸고 다시 한 번 충돌했다. 서클들은 학도호국단이 작성한 축제 계획을 소비, 향락 문화로 규정하여 거부하였다. 학도호국단은 축제를 강행했지만 축제는 파행

속에서 진행되었다. 급기야 연예인 초청 공연, 그룹사운드 공연, 폐막 페스티벌 등을 많은 학생들이 실력으로 저지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1980년대 축제에서 소비 향락 문화는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이에 반해 탈반의 '금관의 예수'는 학교 당국의 제지를 당하다 결국 공과대학 식당에서 공연해 큰 호응을 얻었다.

1982년은 축제가 대동제로 자리매김한 해였다. 1981년 학도호국단과 서클의 갈등과 충돌은 1982년 5월 학예제 준비 과정에서 양측이 학예제추진위원회 구성에 합의하면서 해결되었다. 학예제는 크게 학술제, 민속제, 예술제, 오락 행사로 나누어 진행하였는데, 쌍쌍 파티, 카니발과 같은 소비 향락적인 행사가 사라지고 전통과 민중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는 행사가 많아졌다. 특히 개막제에서는 1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고사(告祀)를 치뤄 학생들이 평소 가슴에 담아 두던 말들을 쏟아냈고, 마지막 날 대운동장에서 열린 민속제에는 3천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 축제의 절정을 이루었다. 이전의 축제와는 달리 학예제 기간 동안 비판적 지성의 열기가 관악 캠퍼스에 가득했다. 1982년 10월 대학 축전 역시 전반적으로 민족주의적 흐름이 짙게 나타났다. 개막제에서 마지막 날 민속제까지 잔잔한 듯하면서도 뜨거운 열기가 관악 캠퍼스에 흘러넘쳤다. 관악 곳곳에서는 잘못된 현실을 비판하며 대안을 모색하는 학생들의 토론이 이어졌고, 특히 민속제에서는 5천여 명의 학생들이 함께 모여 거대한 줄을 함께 당기면서 대동의 한마당을 벌였다. 민속과 무속에 지나치게 비중을 두었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이제 관악의 축제는 많은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의식을 공유하며 이를 현실 비판과 민족주의로 승화하는 명실상부한 대동제가 되었다.

학원 자율화 조치 이후 1984년부터 그 동안 5월에 진행하던 학예제는 5·18 광주 항쟁을 기념하는 '5월제'로 이름을 바꾸었다. 학교 당국의 승인과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진행된 5월제 내내 광주 문제를 비롯한 사회적 문제가 쟁점이 되었고, 축제와 더불어 격렬한 교문 앞 시위를 했다. 1984년부터 가을 대학 축전을 '가을 축전'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이때의 가을 축전은 학내 사태로 공권력이 학내에 들어온 상황에서 준비되어 행사 내용이 부실하고 학생들의 참여도 저조하였다. 그러나 1985년 봄 5월제는 총학생회장 및 학생회 간부들이 구류되거나 연금되어 어려웠는데도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호응하였다. 민중 민주에 대한 지향을 거의 모든 행사에서 담고 있었고, 특히 마지막 날 진행된 대동굿에는 5천여 명의 학생이 용머리 싸움과 1980년 5월 광주를 재현하는 공연에 참가하였다. 총연극회 공연 '산자여 따르라'도 큰 호응을 얻었다. 1985년 가을 축전은 '삼민제(三民祭)'라는 이름으로 진행했지만, 축제 예산이 깎이고 축제 기간에 연

학내 집회 도중 학생회 간부가 연행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학생회 간부를 학교 안에서 체포한 데 격분한 1천여 명의 학생들은 본부의 기물을 파손하고 도서관을 점거하여 철야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1986년 봄 5월제도 학교 당국의 예산 지원 없이 진행하였다. 학생 3천 5백여 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된 전야제에서는 노래패 ‘메아리’가 한국 현대사를 날카롭게 비판, 풍자한 노래 공연을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다음날 개막제 도중 원예학과 1학년 이동수가 학생 회관에서 분신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나 축제는 파행 속에서 마무리되었다. 1986년 가을 축제 ‘합성제’도 축제 준비 위원 수배와 학교 당국의 축제 불허 방침, 교문 출입 통제 등으로 인해 원만하게 행사를 치르기 어려웠다.

하지만 1987년 본부가 총학생회를 인정한 이후 처음 연 가을 축제 ‘통일 합성제’부터는, 학교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최초로 문화관을 사용하는 등 축제 여건이 나아졌다. 축제 첫날 본부 앞 잔디밭에 모인 학생 2천여 명은 “민족 주체성 확립”과 “민족 통일”을 기원하는 천제(天祭)를 함께 올리고, 교문으로 나가 ‘해방춤’, ‘4박자춤’ 등으로 놀이마당을 벌인 뒤 운동장 앞에서 장승제를 가졌다. 마지막 날에는 고싸움을 한 뒤 1천여 명이 교문 앞에서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통일 합성제는 이전 축제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하였으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점이 돋보였다. 특히 6·10 항쟁 등을 주제로 한 각종 사진전이 많이 열렸다. 이후 축제는 학교 당국의 협조를 받으며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또한 1988년 가을 축제 ‘자주 관악제’는 학과, 단과대학, 동아리를 중심으로 자체 소규모 행사를 많이 기획했고, 축제용 소식지도 발행하였다. 1989년 이후 축제의 이름이 더 다양해졌다. 1989년 봄 축제 ‘새벽 출정’에서는 ‘통일 10종 경기’가 1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교내 곳곳에서 펼쳐졌는데, 이 행사는 이후 한동안 관악 축제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1989년 가을 축제 ‘해방 장정’에서는 심포지엄과 같은 학술 활동이 크게 줄고 외부 단체의 공연이 늘었다. 198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축제에서 소규모 단위의 다양한 행사들이 늘어났지만, 대규모 개막제와 마지막 날 교문 앞 시위는 계속되었다.

종합화 이후 활성화한 공동체 문화는 학생들의 ‘학생 농민 연대 활동’(이하 농활)에서도 잘 드러난다. 농활의 기원은 일제 시대의 감상적 인도주의로 시작한 농촌 계몽 활동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러한 계몽 활동은 1960년대까지 지속하였는데, 농민에 대한 우월감을 밑바탕에 깔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봉사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1960년 4·19 혁명에 영향을 받은 학생들은 ‘향토개척단’ 활동을 시작하였다. 학생회 산하

향토개척단은 자원 활동가를 대규모로 모집하고 특정 마을과 자매 결연을 맺어 농활을 하였다. 당시 학생들은 근로, 교육, 계몽 활동을 벌여 농민의 나태와 무지를 깨뜨리고 농업, 농민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향토개척단 활동은 5·16 쿠데타 이후에도 명맥을 유지하였지만, 이 역시 과거 농촌 계몽 활동과 마찬가지로 시혜적 활동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더군다나 점차 정치적 규제까지 더해져 활동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1970년대 중반 이후 민중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학생들은 농민과의 연대를 중시하는 농활을 시도했다. 즉, 학생들은 농민 활동을 지원하여 농민들의 주체적인 힘을 키우는 동시에, 학생 자신도 농활을 통해 사회 문제에 대한 구체적 경험을 얻고 자기를 단련하고자 하였다. 이때부터 농활은 근로 활동뿐 아니라 농민과의 대화를 중시하였고, ‘아동반’, ‘청소년반’, ‘청년반’ 등 분반 활동과 호별 방문을 하기 시작했다. 당시 농활은 서클 중심의 팀 단위로 펼쳤는데, 선진적인 학생 활동가 위주로 했기 때문에 강한 규율을 강조하였다. 반면 대중성과 통일성은 확보하지 못했다. 농활은 1978년을 전후해서 큰 어려움을 맞이했다. 1977년 개정된 ‘하계봉사활동지침’에 따라 기존의 서클 중심 팀 농활을 억제하는 대신, 학장의 책임 하에 수행하는 단과대학 단위 농활과 전공과 직결되는 기능 위주의 농활만 권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클 중심의 팀 단위 농활은 이후에도 음성적으로 진행되었다.

1980년대 들어와 학생들은 학생운동 차원에서 변혁적 지향을 강화했다. 농활대원의 투철한 생활 자세와 농활대 내의 철저한 규율을 더욱 중요시했고, 농업, 농민 문제를 사전에 치밀하게 토론했다. 학생들은 ‘잠자는 시간 최대한 줄이기’, ‘근로 시간 준수하기’, ‘비가 와도 일하기’ 등의 규율을 거의 대부분 준수하였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농민이 제공하는 새참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둘러싼 ‘새참 논쟁’이 가열되었다. 새참 논쟁은 이미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어 매년 농활 때마다 되풀이 되는 연례 행사였다. 농민들의 부담을 이유로 새참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학생들이 있었지만, 농민들의 정성을 생각해서 새참을 반드시 먹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이는 농민과의 연대를 통해 민중성을 획득하는 방법을 둘러싼 논쟁이었다. 당시 농민들 중에서는 농활대를 불온시하여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행정력을 동원한 농활대 탄압도 심했다. 농민들의 신뢰를 얻어 연대를 이뤄내는 것은 농활의 최우선 과제였다. 결국 새참은 농민들의 정성이므로 맛있게 먹는 것으로 대강의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1990년대 초까지도 곳곳에서 논쟁이 계속되었다.

또한 1980년대에는 기존 팀 단위 농활이 점차 학과 단위 농활로 바뀌었다. 1984년 학

생회 부활 이후 학생회가 학과 농활을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농활은 더 대중적이고 공개적으로 확대되었다. 1988년 총학생회에 농민분과를 조직하면서 농활은 총학생회의 중요한 사업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농민 운동에서 농민회를 중심으로 한 전국 체계를 완성하고 학생 운동에서도 학생회를 중심으로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이하 전대협)라는 전국 조직을 만들면서, 이 두 조직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일상적이고 대중적인 농활이 가능해졌다. 농활을 통해 농민회와 학생회를 강화한다는 ‘전투적 농활론’을 제기한 것도 바로 이 즈음이었다. 그런데 1988년 여름 농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농활 버스와 농활 지원비 문제를 둘러싸고 학생회와 학교 당국 간의 마찰이 일어났다. 학생회는 지원을 요구하며 총장실을 점거하였고, 학교 당국은 관련 학생 9명에게 제적 등 징계를 내렸다. 농활과 관련하여 이전부터 계속된 학생들과 학교 당국 사이의 미묘한 신경전이 극단적인 형태로 폭발한 것이다. 하지만 1990년 정도에 농활은 완전히 틀을 잡았다. 거의 모든 학과에서 20~30명씩 농활대가 꾸려졌고, 2천~3천 명 남짓한 학생이 충청도 지역으로 농활을 떠났다. 그리고 1991년에는 “나를 변화시키는 여름 농활”이라는 표어를 달고 이전의 전투적 농활론에서 벗어나 민중의 삶을 배우고 노동의 신성함을 느끼는 농활을 주창하였다. 농활은 서울대생이라면 한 번쯤은 경험해야 할 소중한 연대 활동이자 공동체 문화였다.

#### 4) 녹두거리의 형성

운동권 문화, 공동체 문화가 활성화되면서 그 동안 대학 문화를 상징하던 ‘낭만’이라는 단어가 비판을 받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대학가의 낭만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관악 캠퍼스 이전 직후에도 일일 찻집이나 미팅은 여전히 인기가 있었다. 모 여자 대학의 쌍쌍 파티가 있는 날이면 수많은 학생이 초청을 받고 가거나 스스로 찾아가곤 하였다. 미팅은 신입생을 중심으로 3월 중순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미팅 파트너와 같이 고고춤을 즐기는 이른바 ‘고고미팅’이 유행하였다. 고고미팅은 학사 일정 시기에 따라 ‘개빙고’, ‘중빙고’, ‘종빙고’ 등으로 부르며 월례 행사로 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학가의 낭만을 즐기기에 초창기 관악 캠퍼스 주변은 너무 썰렁했다. 주점과 다방은 물론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 그린벨트로 묶여 아무 것도 없는 황량한 교문 주변에는 찻집 한 곳 없었다. 학교 앞 고개를 넘겨

나 신림동으로 나가야 주점과 다방이 있었다. 관악 캠퍼스로 옮긴 뒤 몇 년 간 학교 앞 험한 고개 너머 봉천 4거리에 있던 ‘일미집’, ‘한잔집’, ‘미도관’ 등이 학생들의 사랑을 받았다. 신림 4거리의 중국집에서는 갖가지 명목의 단합 대회, 동문회, 학회 등을 열었고, 특히 1970년대 말부터 들어서기 시작한 순대집은 이 지역의 명소가 되었다. 자기가 다 마신 잔으로 술을 권하는 ‘잔돌리기’가 기본인 당시의 술자리에서 학생들은 유신 헌법을 성토했거나, 통기타 반주로 포크송을 부르고 좋아하는 시와 자작시를 낭송하였다. 또한 통행금지 때문에, 11시 반쯤 1차를 끝내고 근처 자취방이나 여관방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 술을 마시는 경우도 많았다. 몇몇 학생은 아무 버스나 타고 종점까지 간 뒤 근처 산에서 술을 마시기도 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와 도림천 주변 신림2동과 신림9동 지역이 관악 캠퍼스의 대표적인 대학가로 성장하였다. 이 지역에는 관악 캠퍼스 이전 초기부터 각종 하숙집, 고시원, 식당, 주점, 다방, 당구장 등이 들어섰다. 그중 대표적인 주점은 289번 버스 종점 앞에 있었던 ‘녹두집’이었다. 녹두집의 이름을 따서 학생들은 이 지역을 ‘녹두거리’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녹두집 외에도 ‘청벽집’, ‘탈’, ‘달구지’, ‘두레박’, ‘회빈루’, ‘스페이스’ 등이 1980년대 녹두거리에서 학생들의 사랑을 받았다. 1980년대 학생들에게 녹두거리는 일종의 정신적 ‘해방구’이자 강요된 질서에 대한 ‘저항의 공간’이었다. 학내 집회와 시위가 있던 날이면 녹두거리 주점들은 대만원을 이루었다. 운동권이든 아니든 동료들이 무참하게 짓밟히고 끌려가는 모습을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학생들은 자신들의 무력함과 죄의식 그리고 정권의 폭력에 대한 분노를 술과 담배로 달랬다. 특히 금요일에는 2시 아크로 집회, 4시 교문 투쟁, 8시 주점 뒤풀이, 11시 자취방 토론이 정해진 코스였다. 안주는 라면 국물 정도였지만, 학생들은 「타는 목마름으로」, 「아침이슬」, 「농민가」, 「출정가」 같은 민중 가요나, 「캔디」, 「원탁의 기사」 등 인기 만화 주제를 안주 삼아 술을 마셨다.

녹두거리에는 주점만 있지 않았다. 1980년대 사회 과학의 열기를 타고 여러 사회 과학 서점이 생겨나 학생 운동의 지식 발전소 역할을 했다. 지금도 남아 있는 ‘그날이 오면’은 6·10 항쟁의 분위기가 절정에 이른 1987년 하반기에 문을 열었다. ‘그날이 오면’ 이외에도 1985년 문을 연 ‘열린 글방’과 ‘전야’가 녹두거리에 자리 잡았다. 이 서점들은 1992년 ‘열린 글방’이 문을 닫을 때까지 녹두거리의 “서점 트로이카”라 불리며 사회 과학 붐을 주도했다. 서가에는 각종 사회 과학 서적들이 가득 찼는데,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마르크스주의 관련 서적들이 다수를 차지했다. 책을 구입할 여유



가 없는 학생들은 서가 앞에 앉아 밤새 수많은 서적들을 탐독하였다.

하숙집도 녹두거리에 많이 들어섰다. 녹두거리의 하숙촌은 신촌이나 혜화동 등 다른 대학가보다 비용이 싼데다가 주인의 인심이 좋았다. 이 때문에 졸업하고 직장을 구한 뒤에도 다시 녹두거리 하숙집을 찾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하숙집은 단순히 잠자고 생활하는 곳이 아니었다. 학생들은 책으로 가득한 하숙집 좁은 방에서 담배를 수북히 쌓아놓고 소주잔을 기울이며 사회와 시국을 성토했다. 학생 운동을 주도한 학생들은 이곳에서 학생 운동의 방향을 논의하기도 했다. 녹두거리뿐만 아니라 봉천 4거리, 신림 4거리, 낙성대 주변에도 하숙집이 많았다. 또한 녹두거리는 전국의 고시생이 몰려드는 한국의 대표적 고시촌이 되었다. 지금도 녹두거리에는 약 3만 명쯤 되는 고시생이 공부하며 생활한다.

다방은 대학 문화의 메카이던 종합화 이전 시기만큼 학생들의 사랑을 받지는 못했지만, 관악 캠퍼스 주변에도 계속 생겨났다. 종합화 이전 동숭동을 대표한 ‘학림다방’의 전통을 잇기라도 하듯 봉천 4거리와 신림 4거리에는 ‘학림’이라고 이름 붙은 다방이 각각 문을 열었다. 그 밖에도 신림동에는 ‘신한’, ‘신영’, ‘대학촌’ 등의 다방이, 봉천동에는 ‘영빈’, ‘대학’ 등의 다방이 들어섰다. 1980년 이후에는 비디오를 상영함으로써 하숙생이나 기숙사생들을 끌어들이기도 했다. 신림 4거리에는 ‘릭스’라는 카페와 ‘두루’, ‘카사노바’ 같은 레스토랑이 들어서서, 봄마다 학생들의 미팅 장소로 각광을 받았다. 1984년 녹두거리에도 분위기 있는 카페가 들어서기 시작했는데, 그 뒤 수가 급속하게 늘었다. 이 카페들은 학생들의 휴식 공간이자 각종 세미나를 하는 학습 공간이었다.

당구장은 학생들의 위락 시설 중 가장 대표적인 장소였다. 녹두거리에만 당구장이 20여 곳 있었고 신림 4거리나 봉천 4거리 부근까지 합치면 당구장만 40여 곳이나 되었다. 당구를 치는 학생이 많아 어스름 해질녘이면 언제나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 1980년대 중반 녹두거리 주변의 건물은 대개, 지하는 카페나 레스토랑, 1층은 주점, 2층은 당구장이었다. 신림동 봉천동을 중심으로 수많은 여관이 들어서기 시작한 때도 1980년대 중반이었다. 대부분 이른바 “러브호텔”로 대학가 분위기와는 맞지 않았다. 하지만 1차, 2차, 3차까지 마치고 동료들끼리 술을 사서 여관에 들어가 새벽까지 잔을 기울이는 학생도 있었다. 여관은 대부분 간판에 “TV 상영”이라 써 놓고 학생들을 유혹하였다. 봉천동과 신림동의 신림극장, 영성극장, 봉천극장 등 학교 주변의 소극장도 학생들이 자주 가는 곳이었다. 이 극장들은 대부분 1천 원만 내면 영화 2편을 동시에 볼 수 있어 무료한 시간을 보내려는 학생들에게 인기가 있었다. 이렇듯 1980년대까지 녹두거리를 비롯한 관

악 캠퍼스 주변 대학가는 대학 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일반 소비 문화를 함께 받아들였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소비 문화가 급격하게 확산하고 대학 문화의 정체성에 문제가 생기면서 대학가 모습 역시 크게 달라진다.

## 제 4 절 소비 문화의 확산과 대안 모색(1990~2006년)

### 1) '신세대' 학생과 대학 문화의 정체성

1990년대 한국 사회 전반에 소위 '신세대' 담론이 확산되었다. 대체로 1970년대 이후 태어난 20대 전후의 젊은이들을 일컫는 신세대 담론은, 1980년대 대학생들과 확실히 다른 1990년대 대학생의 특징에 주목하였다. 1990년대 대학생은 몇 가지 측면에서 이전 세대와는 다른 경험을 한 세대였다. 첫째, 이들은 1987년 6·10 항쟁과 직선제 개헌으로 한국 사회가 민주화하기 시작한 이후 대학에 진학한 집단이었다. 즉, 대학 진학 전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민주적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전 세대에 비해 자유분방한 대신 정치 문제에 관심이 적고 개인주의적이었다. 둘째, 신세대들은 한국 경제가 한창 성장하던 1970년대에 태어나서 '3저 호황'으로 한국 경제가 최고의 성장을 구가하던 1980년대 중후반에 청소년기를 보냈다. 이들은 물질적 풍요 속에서 개인의 기호를 더욱 중요하게 여겼고 육체와 감성에 따라 욕망을 표출하였으며 외모와 스타일을 강조하였다. 셋째, 경제 성장의 결과 신세대는 문화에 더 크게 영향을 받았다. 이 시기 가장 주목할 만한 문화적 변화는 소비 문화의 확산이었다. 신세대들이 경험한 물질적 풍요는 이들을 이전 세대보다 훨씬 더 소비 지향적으로 만들었다. 텔레비전, 영화, 컴퓨터, 전자 게임, 광고 등 영상 매체가 넘쳐나고 외국 대중문화가 폭넓게 유입된 것도 신세대를 이전 세대와 구별하게 만드는 요인이었다. 1990년대 이후 지금까지 신세대 말고도 'X세대', 'Y세대', 'N세대', 'U세대' 등 다양한 세대 담론이 등장하였지만, 이 세대들 역시 본질적으로 '신세대'와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서울대에도 신세대가 등장했다. 1990년대 이후 입학한 신세대 서울대생의 특징은 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2001년 '서울대학교 대학생생활문화원'으로 명칭 변경)의 신입생 조사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5-1-4〉 신입생의 학비 충족도(1987~1999년)

(단위: %)

연도 충족도	1987	1989	1991	1993	1995	1997	1999
여유 있음	16.2	22.9	30.5	38.9	38.7	34.2	26.1
겨우 충당	33.7	36.9	39.4	37.9	34.6	38.1	43.3
조금 부족	29.9	26.4	22.6	17.1	20.3	22.9	24.8
많이 부족	20.1	13.3	7.1	5.0	5.1	3.9	5.7
무응답	0.2	0.5	0.3	1.1	1.3	0.9	0.1

출전: 이창기, 1989년, 「지난 8년 간 서울대학교 신입생의 특성 변화」, 『학생 연구』 제24권 제1호, 『1991년 신입생 현황 자료집』, 『1993년 신입생 현황 자료집』, 『1995년도 신입생 현황 자료집』, 『1997학년도 서울대학교 신입생의 일반 특성과 심리 특성 보고서』, 『1999년 서울대학교 신입생 특성 조사 보고서』.

〈표 5-1-5〉 여학생 신입생 비율(1991~2005년)

(단위: %)

연도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비율	21.4	22.6	22.7	27.6	31.6	38.2	39.6	42.6

출전: 이창기, 1989년, 「지난 8년 간 서울대학교 신입생의 특성 변화」, 『학생 연구』 제24권 제1호, 『1991년 신입생 현황 자료집』, 『1993년 신입생 현황 자료집』, 『1995년도 신입생 현황 자료집』, 『1997학년도 서울대학교 신입생의 일반 특성과 심리 특성 보고서』, 『1999년 서울대학교 신입생 특성 조사 보고서』, 『2005년 서울대학교 신입생 특성 조사 보고서』.

〈표 5-1-4〉에서 알 수 있듯이 1980년대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 신입생들의 경제 환경은 점점 더 좋아졌다. 특히 1990년대 전반기에 학생들의 경제 환경은 최고조였다. 물질적 여유는 이전 세대와 다른 신세대의 기본 특징이다. 이러한 경제적 여유를 바탕으로 신세대 서울대생은 1980년대 학생보다 더 자유분방하고 개성이 강했다. 소비적 성향도 강했다. 물론 1990년대 후반기에 들어와 한국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학생들의 경제 환경이 조금 악화하였으나, 신세대 서울대생의 특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1990년대에 생긴 또 다른 중요 변화는 여학생의 급증이었다. 1980년대 20~25% 정도를 차지하던 신입생 중 여학생 비율은 1990년대 전반까지 큰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1995년에 22.7%를 기록한 이후 여학생의 비율은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고, 증가 속도는 2000년대에 들어와 더욱 커져 2004년부터 40%를 넘었다. 여학생의 급속한 증가는 여학생들의 학력 신장과 함께, 1998년부터 실시한 ‘고교장 추천제’와 같은 다양한 신입생 선발 방식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여학생들이 대거 입학하자, 지난 50여 년 동안 남학생 위주로 형성되었던 서울대의 대학 문화는 큰 변화를 맞이한다.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1990년대 이후 입학한 서울대생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1980

〈표 5-1-6〉 학생들이 생각하는 자신의 정치적 성향

(단위: %)

연도	정치 성향	매우 진보	진보	중도	보수	매우 보수
1992		-	46.1	40.9	-	13.0
1997		9.2	38.4	41.1	10.1	0.9
2002		3.3	27.5	51.9	16.0	1.2
2005		3.7	27.5	40.5	25.0	2.6

출전: 「서울대생의 정치의식 설문 조사 결과」, 『대학신문』 1992년 9월 28일 특집판, 「97 서울대생의 정치의식」, 『대학신문』 1997년 11월 17일, 「서울대인 의식조사」, 『대학신문』 2002년 10월 14일, 「우회전하는 서울대생 정치 성향」, 『대학신문』 2006년 3월 13일 1면.

년대 서울대생과 의식 구조가 달랐다. 가장 큰 변화는 정치적 보수화 경향이다. 1980년대만큼은 아니더라도 1990년대 서울대생은 다른 신세대에 비해 정치적 관심도가 높았다. 『대학신문』에서 1992년과 1997년에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정치에 대한 관심’을 묻는 질문에, ‘많이 있다’는 31.5%(1992년)와 24.0%(1997년), ‘약간 있다’는 45.8%와 47.8%, ‘별로 없다’는 20.7%와 24.4%, ‘전혀 없다’는 2.0%와 3.8%를 각각 기록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정치적 무관심이 커졌지만 1990년대에도 70% 이상의 학생이 정치에 관심을 가졌다. 하지만 정치적 성향은 1990년대 후반 이후 급격하게 보수화하였다. 이는 『대학신문』에서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학생들의 정치의식 조사를 살펴보면 잘 드러난다.

〈표 5-1-6〉에서 1997년과 2005년을 비교했을 때,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중도’라고 대답한 학생의 비율은 40% 정도로 비슷하지만 ‘진보’와 ‘보수’의 비율은 각각 47.6%와 11%에서 31.2%와 27.6%로 변화하였다. 1990년대 중반까지 ‘진보’가 압도적으로 우위였다가 1990년대 후반 이후 ‘보수’의 비율이 2배 이상 증가하여 ‘진보’와 거의 균형을 맞췄다. 그런데 〈표 5-1-6〉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학생들의 정치의식은 변화하였다. 사회학연구실습팀의 조사에 따르면, 대학이 ‘지식을 매개로 개인의 자아를 실현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1990년 40.6%에서 1995년 56%로 상승했으나, ‘사회 변혁을 위한 사회 정치적인 사회화의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라는 의견은 1990년 22.3%에서 13.6%로 줄어들었다. 앞서 언급한 『대학신문』의 조사를 보면 몇몇 질문에 대해 1992년의 조사와 1997년의 조사가 큰 차이를 보였다. 첫째,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민주주의 유형’을 묻는 질문에 대해, ‘서구식 자유 민주주의’라는 응답이 17.0%에서 26.8%로 크게 증가한 반면 ‘서구식 사회 민주주의’라는 응답은

30.1%에서 14.3%로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민중 민주주의’라는 응답은 23.4%에서 24.8%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둘째, ‘우리 나라에 가장 적합한 경제 체제’를 묻는 질문에,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라는 응답이 4.4%에서 15%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러나 ‘사회주의적 혼합 경제 체제’와 ‘사회주의 계획 경제 체제’라는 응답은 각각 23.7%와 7.8%에서 7.0%와 1.0%로 3배 이상 줄어들었고, 대신 ‘자본주의적 혼합 경제 체제’라는 응답이 57.6%에서 67.3%로 증가하였다. 셋째, ‘바람직한 통일 방식’을 묻는 질문에 ‘연방제 방식의 통일’이라는 응답이 32.5%에서 16.6%로 절반 정도 줄어들었다. 이러한 정치의식 변화는 1990년 초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세계화, 신자유주의와 같은 경쟁 이데올로기의 확산에서 영향을 받았다. 이는 1990년대 후반 학생들이 급격하게 정치적으로 보수화하는 바탕이 된다.

1990년대 후반 이후 본격화한 학생들의 정치적 보수화는 가정 환경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2005년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부모의 소득이 많고 이른바 ‘강남 8학군’ 등 대도시 지역 출신 학생일수록 보수적 정치 성향이 강했다. 앞서 <표 5-1-4>에서도 살펴보았듯이 1990년대에 들어와 학생들의 경제 환경은 이전보다 많이 좋아졌다. 특히 서울대의 경우 학생 아버지의 학력 및 전문직 관리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학생 아버지들의 학력 비율은 대학원 이상 24.5%, 대졸 44.1%였는데, 40대 이상 전체 남성의 학력 평균은 대학원 이상 1.8%, 대졸 22.9%에 불과했다. 40대 이상 전체 남성 가운데 불과 1.4%만이 전문직과 관리직 종사자였지만, 학생 아버지들 가운데 전문직과 관리직 종사자 비율은 각각 14.1%와 25.5%에 달했다. 서울대생들의 가정환경은 일반인들보다 훨씬 안정되어 있었고, 이는 학생들의 정치의식 형성에 영향을 끼쳤다. 또한 단과대학에 따라서도 정치의식에 차이가 있었는데, 의과대학, 경영대학, 음악대학, 치과대학 등 부모의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단과대학일수록 학생들이 스스로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다.

정치의식과 함께 학생들의 성(性) 의식도 크게 변화였다. 1985년 『대학신문』의 조사에 따르면 당시 학생들 중 49%가 ‘사랑한다면 혼전 성 관계도 무방하다.’고 답했고 44.2%는 ‘혼전에는 절대 순결해야 된다.’고 답했다. 여학생들 가운데 72%는 ‘혼전 순결’이 필요하다고 답했지만, 남학생들 가운데 58.2%는 ‘사랑한다면 혼전 성 관계도 무방하다.’고 상반되게 응답했다. 1988년 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의 조사에서는 11.3%가 ‘결혼 상대자의 순결 여부에 개의치 않는다.’고 답했고 62.2%가 ‘가능한 한 순결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25.7%는 ‘절대 순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75.9%는 자신의 배

우자가 순결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같이 1980년대 학생들은 정치적으로는 진보적이었으나 성(性)이나 결혼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보수적이었다. 특히 학생들은 50% 정도가 ‘사랑한다면 혼전 성 관계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면서도, 70~80% 정도가 자신의 배우자는 가능한 한 순결하기를 바라고 또 순결할 것으로 기대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반면 2005년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의 조사에서는 ‘결혼을 전제로 한 사이라면 혼전 성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가 82.6%를 차지했고, ‘결혼을 전제하지 않은 경우라도 혼전 성 관계가 가능하다.’가 69.6%를 차지했다. 1985년 조사에서 2% 정도밖에 찬성하지 않던 ‘혼전 동거’에 대한 찬성 비율도 2005년 31.5%로 크게 증가하였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여전히 보수적이던 성 의식이 1990년대를 넘어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급격하게 개방화하였다. 하지만 개방적인 성의식과는 별도로 자신의 배우자가 가능한 한 순결하기를 원하는 이중적 태도는 여전히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 밖에 문화에 대한 기호도 많이 달라졌다. 1988년 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당시 학생들은 사적지(65.6%), 박물관(46.7%), 미술관(39%) 등에서 여가 시간을 많이 보냈다. 반면 1998년 『대학신문』 조사에서는 불과 25%의 학생들만이 이러한 문화 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1988년 조사에서 학생들은 학내 행사 가운데 예술 공연을 가장 좋아했으며, 다음으로 민속, 오락, 교양, 학술 등의 행사를 좋아했다. 스포츠 활동을 좋아하는 학생들은 비교적 적었다. 이는 스포츠가 활성화한 반면 예술 공연 관람이 현저히 줄어든 1998년 조사와 대조를 이룬다. 언론 매체와 대중 문화의 수용 면에서도 1980년대와 1990년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1988년 조사 당시 학생들은 신문에서 사회면(45.7%)과 정치면(29.6%)을 가장 관심 있게 보았으나, 1998년 조사에서는 스포츠면(26.8%)과 문화면(25.2%)을 더 많이 보았다. 영화 및 비디오의 경우 1988년에는 학생들의 54%가 비디오를 보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좋아하는 영화 장르도 22%가 예술성 있는 고전 명화를 선택하였다. 1998년 학생들은 14.9%만이 비디오를 보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액션(23.9%), 멜로(13.1%) 등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가벼운 작품을 좋아했다.

1990년대 들어 변모한 학생들의 특성과 의식 구조는 대학 문화를 크게 변화시켰다. 영화, 광고, 록, 댄스, 컴퓨터 게임 등이 부각되고 자유주의 담론과 개인주의 담론이 넘쳐나면서 1990년대 학생 사회의 화두는 ‘정치’에서 ‘문화’로 변하였다. 학생들의 문예 활동도 사회 집단의 문제보다는 개인의 일상과 심리, 갈등, 취향 등을 주제로 잡기 시작했다. 담배 연기와 ‘깡소주’, 비공개 세미나, 화염병과 유인물, 사회 과학 서적 대신에,

현란한 염색 머리와 액세서리, 찢어진 청바지와 힙합 바지, ‘스타 크래프트’, 하드락 카페, 병맥주가 대학 문화의 키워드로 자리 잡았다.

1990년대 학생 사회의 화두는 문화였지만, 역설적으로 그 과정에서 대학 문화는 정체성을 상실하였다. 1980년대까지 대학 문화는 대중 문화, 소비 문화와 분명하게 구별되는 대항 문화였다. 제도권 언론에서 결코 볼 수 없는 기사와 사설로 『대학신문』의 지면을 채웠고 공중파에서는 결코 보고 들을 수 없는 영화와 노래를 대학에서 만들고 공유하였다. 하지만 1990년대부터 대중 문화, 소비 문화와 구별되는 대학 문화를 점차 찾아보기 어려웠다. 오히려 대중 문화, 소비 문화가 대학에 퍼지면서 대학 문화는 점차 이에 흡수되었다. 그 결과 대학 문화는 정치가 문화를 지배하던 1980년대보다 더 획일화하였다. 개개인의 다양한 욕구와 취향은 다양한 상품을 소비하게 했지만, 그러한 것을 대학 문화로 표현하지는 못했다. 1980년대 대학에서 다수가 비슷한 극과 노래를 보고 듣고 따라했듯이, 1990년대 대학도 똑같았다. 오히려 이제는 대학뿐만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 똑같은 문화가 유행이라는 이름으로 일방 통행할 뿐이었다. 대학은 대항 문화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대중 문화를 소비하는 ‘시장’으로 전락하였다.

소비 문화, 상업 문화의 대학 침투에 반발하는 학생도 있었다. 1994년 6월 1일 대학본부 앞 잔디밭에 청중 3천 명이 모인 가운데 KBS ‘그린 콘서트’가 개최되었다. 음악대학 합창단과 오케스트라, 음악대학 교수, 서울대 아카펠라 중창단 등이 출연한 이 공연에 대해 학교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총학생회는 이날 행사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공연을 시작하기 직전 피켓 시위를 비롯한 선전전을 펼쳤다. 학생들은 기획 단계에서 학생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행사에 반발했고, 고급스러운 문화 행사 뒤에 숨어 있는 소비 문화의 대학 침투를 경계하였다. 1996년 5월 31일 대학본부 앞 잔디밭에서 열린 개교 50주년 기념 ‘관악인의 밤’ 행사에도 같은 비판이 제기되었다. SBS 주관으로 열린 이 행사에는 서울대학교 출신 가수를 비롯하여 유명 연예인이 대거 참여하였다. 개교 5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대학 문화보다 대중 문화와 소비 문화가 전면에 등장했다는 사실이 비판의 핵심이었다. 서울대에 지난 50년 동안 대중 문화, 소비 문화와 긴장 관계를 맺으며 지속적으로 발전한 대학 문화가 있는데도, 「아침이슬」을 제외하면 오로지 대중 문화, 소비 문화만으로 채워진 행사가 되었다는 지적이었다. 이는 대학 문화가 점차 대중 문화, 소비 문화에 흡수되던 1990년대의 상황을 잘 보여 주는 사례다.

현재 대학 문화는 최소한 다섯 종류의 문화가 섞여 있다. 대중 문화, 소비 문화와 큰

차이가 없는 문화와, 전통적인 운동권 문화를 계승한 문화, 그리고 이 둘 사이에 여러 문화가 있다. 대중 문화, 소비 문화에 가깝지만 더 창조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가 그중 하나다. 예를 들어 스포츠댄스는 흔히 상업적인 장르로 인식하지만, 학생들이 이윤 추구와 거리를 두고 창조적으로 실천한 스포츠 댄스는 대중 문화, 소비 문화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대학 문화의 한 부분이다. 운동권 문화에 가까운 쪽에서 대중 문화의 영향력을 수용한 경우도 있다. 노래패 ‘메아리’, 마당패 ‘탈’ 등이 그 경우다. 이들은 록 등 대중가요의 형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민중 가요와 개그콘서트 형식을 도입한 마당극을 벌이며 대중성을 도모하면서도 저항 정신을 계승하였다. 그리고 대중 문화 소비 문화, 운동권 문화와 모두 거리를 두면서 대중적 기반을 가지려는 독립 문화권이 있다. 특히 독립 문화권은 독립 영화, 록, 동성애 등 소수 문화, ‘언더 문화’를 확산하여 대학 문화의 폭을 넓혔다. 그러나 소수 문화, 언더 문화가 대학 문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크지 않다. 분명한 것은 1990년대 들어 대학 문화가 다양해졌으나 대중 문화, 소비 문화와 구별되는 정체성이 사라졌다는 사실이다.

## 2) 축제의 다양화

1990년대 이후 대학 문화가 변화하는 양상은 축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980년대의 축제는 공동체 문화가 응축된 대동(大同)의 한마당이였다. 그래서 학생들은 축제라는 말보다 대동제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와 공동체 문화로서 축제가 가지는 대동의 의미는 점차 약해지기 시작했다. 1990년 봄 축제 ‘불꽃제’의 경우 축제의 전체적인 형식은 이전과 같았고, 개막제에 4천여 명이 모였다. 그러나 동아리 발표회와 공연, 통일 10종 경기, 경연 대회, 학과 단과대학별 모임 등 개별 행사에는 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하였다. 매년 축제 때마다 마지막을 장식했던 격렬한 시위도 참여하는 학생들이 줄었다. 1990년 가을 축제 ‘앞으로 앞으로’는 ‘메아리’의 폐막 공연에 3천여 명이 모이고 다양한 기획 프로그램을 준비했지만, 학생들의 개인주의적 행동과 비주체적 참여로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더 이상 학생들은 과거와 같이 축제를 대동의 장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축제라는 말보다 대동제라는 말이 훨씬 자주 쓰였지만, 반대로 축제의 ‘대중성’은 갈수록 약해졌다. 학내에 퍼져 가는 정치적 무관심과 소비 문화 때문에 축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기존의 정치적 지향과 새롭게 요구받는 대중성 사



이에서 고민했다. 우선 점차 파편화하는 학생들을 축제에 끌어 모으는 것이 어려웠고, 다양해진 학생들의 요구를 축제에서 충족시키는 것도 쉽지 않았다. 1980년대는 일부러 강조하지 않아도 축제에서 공동체 의식을 공유하였지만, 1990년대부터는 축제에서 공동체 의식을 의도적으로 강조해야만 했다.

1991년 가을 축제 ‘너의 손을 잡을 때’에서는 “서로의 고민을 공유하고 공동체의 의미를 재조명하는 장”을 강조하였다. 1992년 봄 축제 ‘새벽 열음’도 “관악 공동체의 새벽을 열자”라는 주제로 진행하였다. 하지만 ‘뺨 차기’ 대회가 참여 학생이 없어 취소되는 등 학생들의 참여도는 점차 떨어졌다. 그 동안 축제의 연례 행사이던 폐막식 뒤 교문 투쟁도 1992년부터 사라졌다. 그러자 1993년 가을 축제 ‘가슴 속 자신감으로’에서는 기존 대동제의 대표 행사였던 ‘해방 가요제’와 ‘통일 10종 경기’ 등 단체 행사 대신에 개별로 참여하는 새로운 행사들을 기획하였다. 1994년 봄 축제 ‘중구난방’에서도 축제에서 “놀이와 정치 집회의 결합”을 시도하였다. 이처럼 신세대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 이어졌다. 5·18 학살자 처벌 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된 1995년 봄 축제 ‘해방 선언’은 ‘기획 거리전’, ‘광주 항쟁 사진전’ 등의 행사가 참신했다는 평을 받았고, 각 단과대학이나 학과별로 특성에 맞는 행사를 많이 개발하여 총학생회 중심의 축제를 조금씩 탈피해 갔다.

1994년 가을부터는 축제 기간 중 ‘녹두 문화제’를 개최하여 축제의 공간을 학교 바깥으로 넓혔다. 녹두 문화제는 학교 축제에 인근 주민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나아가 녹두 거리에 올바른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의도에서 기획하였다. 특히 1995년 가을 녹두 문화제에서는 관악산 입구에서 벌인 ‘천지인’ 공연, 화랑교에서 연 전통 혼례식, 정치학과의 ‘모의 관악구 의회’ 등이 학생과 지역 주민에게 호평을 받았다. 학생들의 생활 공간인 녹두거리가 점차 상업적 소비 문화 지역으로 전락하는 현실을 반성하고, 지역 문화에 대한 인식 전환을 꾀하는 계기가 되었다. 비록 녹두 거리에 범람하는 소비 문화의 기세에 눌러 처음 의도만큼 활성화하지는 못했지만 2000년대 이후에도 녹두 문화제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대학 문화에 대한 고민과 모색도 축제를 통해 계속되었다. 1996년 봄 축제 ‘Let off SNU’는 ‘반(反)대학’이라는 급진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검열 반대 문화제’, ‘이반 영화제’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반대학이란 자본주의 질서에 완전히 편입해 생산과 저항이라는 고유한 성격을 잃어 가는 대학 내 여러 문화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 “사회의 주류 질서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그 거부를 통해 새로운 저항의 질서를 창조한다.”는 것

이 주요 내용이었다. 이는 1991년 이후 진정한 대동의 의미가 사라진 축제에 그 의미를 재구축하기 위한 시도였다. 1997년 봄 축제 ‘현장을 대학으로, 대학을 현장으로’는 개막제와 총야영 행사를 중심으로 비교적 광범위한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축제 기간 전후로 펼친 ‘대안 대학’의 문제의식은 전년도 반대학의 고민을 한층 심화하였다. 주류 질서에 대한 부정에서 더 나아가 대안을 찾고자 하였다. 또한 이때부터 록 공연이 명실상부한 축제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학내 록그룹은 물론, 대중가요 록그룹 ‘시나위’와 민중 가요 록그룹 ‘천지인’의 공연까지 다양한 록 공연이 학생들의 관심을 끌었다. 록은 학생들의 일탈과 분출을 이끌어내는 1990년대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1990년대 말에 와서 축제는 본격적인 침체 국면을 맞았다. 1998년 봄 축제 ‘Seoul People’s University’의 경우 급진적인 축제 모토와 동떨어진 이벤트성 행사가 많았고, 그마저 진행할 사람이 부족하거나 참가자가 없어 예고 없이 취소한 경우가 많았다. 1993년까지만 해도 개막제에 학생 4천여 명이 몰렸으나 1998년에는 불과 250명 밖에 모이지 않았다. 심지어 축제 기간 중 대기업 홍보 행사가 열리는 등 소비 문화의 침투도 본격화하였다. 그러나 총학생회 주최 행사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급격히 줄어든 반면, 전통적으로 축제에 참여하지 않던 학생 집단들이 축제 기간 중 독자적으로 행사를 기획해 추진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종교 동아리의 신앙 집회와 콘서트, 농구 동아리의 길거리 농구 대회, 록 밴드의 소규모 공연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축제’를 만들기 위한 자생적이고 능동적인 시도였다. 그러나 다양해진 축제에서 1980년대식 ‘대동’의 모습은 더 이상 발견하기 어려웠다.

2000년에는 ‘서울대 축제는 재미가 없다’는 인식을 깨뜨리기 위해 총학생회가 “우리도 재미자.”는 모토로 봄 축제를 기획하였다. 1999년 가을 총학생회 선거에서 축제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1984년 학생회 부활 이후 비운동권으로는 처음 당선된 ‘광란의 10월’ 선거운동본부(약칭 선본)는, 2000년 총학생회를 운영하면서 이전 축제에서 찾아볼 수 없던 파격적인 기획을 선보였다. 대중적 지명도가 있는 연예인들이 축제 무대에 등장했고, ‘스타 크래프트 대회’나 ‘당구 대회’, ‘뽀뽀 대회’, ‘30 대 30 미팅’과 같은 행사가 열렸다. 행사가 다양해진 만큼이나 축제에 대한 논란 또한 분분했다. 축제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한 것은 분명 큰 성과였고, 재미있고 신선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그러나 한편으로 녹두거리에서나 하는 놀이를 그대로 학교에 옮겨 놓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강한 정치성을 띠던 이전 축제에 대한 반작용으로 단지 재미만을 추구했다는 비판이었다.

2000년 가을 총학생회 선거에서 다시 운동권이 당선되자 축제의 방향을 수정하였다. 2000년 축제를 경험한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설득하기 위해 ‘의미’와 ‘재미’가 모두 있는 행사를 기획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2001년 봄 축제의 “뒤로 나는 슈퍼맨”, 가을 축제의 “도로시, 오즈의 마법사를 의심하다.”라는 표어를 보면, “뒤로 나는”, “의심하다.”와 같은 나름의 저항적 태도를 버리지 않으면서도 “슈퍼맨”이나 “도로시”처럼 친숙한 아이콘을 끌어들이며 대중성을 높이려고 했음을 알 수 있다. 학생들에게서 축제의 행사를 신청받거나 동아리 소모임과 함께 영화제, 가요제, 가장 무도회 등을 기획하는 등 몇 가지 실험을 시도하였고 축제의 내용도 비교적 풍성하게 마련했다. 하지만 기획은 야심찼지만, 총학생회 집행부에서 축제를 기획하고 준비, 진행하는 사람은 소수였다. 이러한 경향은 2002년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축제가 재미있으면서도 문제의식을 담아야 한다는 강박은 여전하였다. 심지어 주제에 맞춰 행사를 무리하게 끼워 넣는 일까지 있었다. “대동제, 치마 입자”라는 표어를 건 가을 축제는 총학생회의 지향인 ‘여성주의’를 전면에 내세웠으나 행사를 매끄럽게 진행하지 못했다. 그리고 하나의 정치적 의제를 전면에 내세운 축제에 대해서 막연한 거부감을 갖는 학생이 많았다. 축제의 주제가 다른 행사와 마찰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었다. ‘밴드 릴레이’, ‘하우스 파티’를 진행하면서, 두 행사 모두 치마를 입고 진행해야 한다는 단서를 붙인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치마를 입어야 참여할 수 있다’는 제한은 여성주의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또 다른 배제와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2002년 가을 총학생회 선거에서 비운동권으로 두 번째 당선된 ‘서울대생, 학교로 돌아오다’ 선본은, 임기 1년의 총학생회가 기획하는 축제로는 지속성과 전문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오직 지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때만 서울대학교 축제가 자기 색깔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총학생회에 종속된 기구가 아니라 자유로운 기획권과 비교적 풍부한 예산으로 문화 행사를 진행하는 축제 기획 전문 기구 ‘축제하는 사람들’이 구성되었다. ‘축제하는 사람들’과 총학생회 집행부, 생활협동조합 학생위원회가 함께 기획한 2003년 봄 축제 ‘광합성 놀이터’는 1996년 학생 총회 이후 가장 많은 학생을 아크로로 불러 모았다. 유례없는 학생 참여를 이끌어 내며 축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지만, 2000년도 축제에서 제기되었던 비판, 즉 ‘재미’와 ‘상업성’만을 쫓는다는 점이 또다시 지적되었다. 하지만 2003년 축제는 연예인 공연보다 학내 동아리와 소모임 공연에 더 힘을 실었다. 특히 축제의 개막 행사였던 ‘광합성 엽록소’는 학생 공연과 연예인 공연이 적절한 조화를 이뤘다. 또한 밴드 릴레이 공연인 ‘다이빙 굴비’ 역시 많은 학생

록 밴드가 참여하면서 큰 호응을 얻었다.

2003년 이전의 축제가 총학생회에서 동아리나 소모임에게 일정한 활동을 요구하는 성격이 강했다면, 이후의 축제는 참여 집단에게 많은 부분을 맡기고 함께 기획하는 경향이 컸다. 총학생회 중심의 일방적 진행에서 벗어나 축제의 기획과 집행 자체를 동아리와 소모임에게 넘긴 아래로부터의 축제를 시작한 것이다. 서울대학교 레이브 커뮤니티 RBMP는 매년 축제마다 야외 레이브 파티를 기획하여 클럽 문화의 저변을 확대했고, 2004년에는 복싱부가 ‘복싱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승마부는 승마 체험 행사를 개최해 학생들이 본부 앞 잔디에서 말을 탈 수 있는 색다른 즐거움을 제공했고, 영화 동아리인 씨네편과 애니메이션 동아리인 노이타미나는 공동으로 영화제를 개최하였다. 그 밖에 2003년부터 시작된 ‘IFF(International Food Festival)’는 서울대학교에 유학 온 외국인 학생들이 자국의 음식을 소개하며 문화를 홍보하는 행사로서, 그동안 축제에서 소외되었던 외국인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004년에 열린 ‘자치방 사운드 페스티벌’은 서울대학교 창작곡 모음 음반 ‘밴드밴드 째째’의 발매 기념 공연으로 기획해 여러 아마추어 뮤지션에게 데뷔 무대를 제공하였다. “학교는 공사중: 옆치樂 뒤치樂”이라는 표어 아래 진행된 2005년 봄 축제는 말 그대로 즐거움에 초점을 맞춘 축제였다. 특히 참여와 표현이라는 키워드로 참여 주체가 스스로 즐길 수 있는 시공간을 만들고자 했다. ‘파이빙 굴비’와 같은 다양한 밴드 공연뿐만 아니라 ‘퀴즈 액션’, ‘광합성 나이트’와 같이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며 즐길 수 있는 행사를 마련했다. 또한 그동안 캠퍼스가 넓어서 학생들의 축제 참여가 불편했던 점을 해결하기 위해 ‘LPG(Live Performance Guerilla)’라는 트럭도 준비했다. LPG 트럭은 학내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밴드, 댄스, 마술 등의 무대 공연을 했다.



그림 5-1-4 IFF에 참여한 외국인 학생들

이렇듯 1990년대를 지나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서울대학교 축제는 ‘사회 문제를 고민하는 장’에서 ‘놀이의 장’으로 변모했다. 특히 2003년 ‘축제하는 사람들’이 탄생한 이후 거기서 기획한 봄 축제 ‘광합성 놀이터’와 가을 축제 ‘단풍 놀이터’는 서울대학교 축제의 대명사가 되었다. 축제는 그 시대 대학 문화를 반영하는 거울이다. 과거 축제가 ‘대동제’라는 이름으로 당시 대학 문화의 공동체성을 잘 반영했다면, 지금 축제 역시 ‘놀이터’라는 이름으로 오늘날 대학 문화의 다양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 동시에 지금의 축제는 대중 문화, 소비 문화 확산이라는 현재 대학 문화의 특징도 분명하게 보여 준다. 축제 때 주류 회사에서 나레이터 모델들을 동원하여 판촉 행사를 하고, 유명 연예인이 나오는 공연에 가장 많은 학생들이 몰리는 풍경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아무 명목도 없는 장터가 수익과 재미만을 좇아 교내 곳곳에 난립하는 모습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서울대학교의 축제가 대학의 축제로서 분명한 자기 색깔을 가지려면 오늘날 대학 문화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수준을 넘어, 정체성을 상실한 대학 문화를 재구성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만 한다.

### 3) 정보 통신 문화의 확산

정보 통신 문화는 학생들이 ‘삐삐(무선 호출기)’, 핸드폰, 컴퓨터 등 정보 통신 기기를 사용하면서 생긴 문화이다. 1990년대 이전에는 대학에 정보 통신 문화가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각종 정보 통신 기기가 개발되어 퍼지면서 학생들의 생활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학생들 사이에서 정보 통신 문화가 생겼으며, 급격하게 퍼진 정보 통신 문화는 현재 대학 문화의 중요한 일부를 차지한다.

학생들 사이에 삐삐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94년경이었고, 1995년에는 거의 모든 학생이 삐삐를 가지고 다녔다. 삐삐가 보급되면서 공중전화 사용이 자연스럽게 증가하여 전화 카드가 생활필수품이 되고 선물로도 인기가 있었다. 그래서 「전화 카드 한 장」이라는 민중 가요가 나오기도 했다. 그 결과 학교 공중전화 앞에 항상 긴 줄이 늘어서 있었고 공중전화로 메시지를 확인하려면 많은 시간과 인내심이 필요했다. 그러다 1997년을 전후해서 시티폰이 등장했다. 시티폰은 발신 전용 휴대 전화로 공중전화 박스 옆에 달린 기지국 근처에서만 통화가 가능했다. 달리는 차 안에서는 물론 걸어가면서 통화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심지어 고개만 돌려도 전화가 끊어진다는 불평이 많았다. 그래도

시티폰만 있으면 삐삐 메시지를 확인할 때 공중전화 앞에서 줄을 서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었다. 하지만 시티폰은 곧이어 등장한 ‘핸드폰’에 밀려 곧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 핸드폰이 학생들 사이에서 처음 등장한 것은 1998년경이었고 이후 2000년을 넘어가면서 거의 모든 학생이 핸드폰을 생활필수품으로 사용하였다. 나날이 진화하는 핸드폰 성능에 발맞춰 오늘날 학생들은 핸드폰으로 전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를 보내고 사진을 찍고 게임도 하고 영화와 TV도 본다.

삐삐, 핸드폰 등 이동 통신 기기가 퍼지면서 학생 생활에 몇 가지 변화가 생겼다. 우선 각종 모임 안내와 관련한 ‘게시판 문화’가 점차 사라졌다. 이동 통신 기기가 보급되기 전까지 학생들은 각종 모임의 시간과 장소를 확인하기 위해 과방이나 녹두거리 서점의 게시판을 자주 이용하였다. 특별한 약속이 없는 학생도 녹두거리에 나가 게시판을 확인하면서 아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으면 찾아 가곤 했다. 또한 약속 장소나 시간이 바뀌면 반드시 게시판에 변동 사항을 붙여 놓았다. 특히 각종 모임이 한꺼번에 몰리는 3월에는 녹두거리 게시판이 각종 게시물로 도배가 되었다. 그러나 삐삐와 핸드폰의 보급으로 약속 장소나 시간의 확인이 간편해지면서 학교 안팎의 게시판은 점차 학생들에게서 외면을 당했고 최근에는 거의 자취를 감췄다.

다음으로 집단 문화가 약해졌다. 서로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이 없던 시절에는 집회를 나가든 술을 마시러 나가든 사람들이 함께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다. 만약 집단에서 떨어져 있게 되면 모임에 합류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삐삐와 핸드폰을 이용하면서 2004년 탄핵 반대 촛불 집회와 같이 무려 15만 명이 모이는 집회에서도 개별적으로 참가한 학생들이 언제든지 서로 연락하여 만날 수 있었다. 또한 집회든 술자리든 도중에 계속해서 걸려 오는 삐삐와 핸드폰 때문에 모임의 집중도 역시 떨어졌다. 심지어 수업 시간에도 삐삐나 핸드폰 소리를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고, 수업에 열중하는 대신 교수 몰래 문자를 보내거나 게임을 하는 학생도 볼 수 있었다. 이는 1990년대 대학 문화를 상징하는 개인주의가 강해지는 데도 일조했다.

끝으로 식사 문화가 변화하였다. 학교 밖 식당에서 음식을 배달시켜 먹는 경우는 이전에도 있었지만 장소가 제한적이었는데, 핸드폰의 보급으로 배달받을 수 있는 장소가 무제한으로 확대되었다. 학생들은 학교 건물 안뿐만 아니라 벤치나 잔디밭과 같은 야외에서도 음식을 배달시켜 먹었다. 그 결과 학교의 문, 게시판, 사물함, 벤치 등에는 학교 주변 식당의 광고 전단이 지저분하게 붙었고 음식물 냄새와 쓰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음식을 배달하려고 학교 밖 식당 오토바이가 학내에 자주 들어오면서 소

음과 안전 문제도 생겼다. 이에 따라 2006년 인문대학에서는 학내 음식 배달을 전면 금지하였지만, 교내 식당이 부족해 학생들의 식사 배달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1990년대 학생 생활에서 나타난 또 하나의 변화는 컴퓨터의 광범위한 보급이다. 서울대학교에서 컴퓨터가 대중화한 것은 1989년 286 AT급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이후였다. 1993년 기존의 AT, XT 기종은 386컴퓨터로 바뀌었고, 프린터도 시끄러운 도트 프린터에서 잉크젯 프린터와 레이저젯 프린터로 바뀌었다. 1996년을 전후해서는 586 펜티엄급 컴퓨터가 보급되고 이후 노트북을 사용하는 학생도 증가했다. 1990년대 전반까지 애용되던 5.2인치 플로피디스크는 워낙 잘 망가져서 애써 준비한 과제물을 날리는 경우가 많았지만, 1990년대 중반 3.5인치 플로피디스크가 대중화하면서 디스크의 휴대성과 안전성은 크게 향상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더 많은 용량을 훨씬 편리하고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USB 메모리가 보급되어 학생들의 컴퓨터 사용이 한결 편리해졌다.

컴퓨터의 대중화는 학생들의 과제 제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원고지나 보고서 용지에 학생들이 직접 손으로 써서 과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과제물은 완전히 컴퓨터 워드 문서로 대체했다. 또한 한글 워드 프로그램이 계속 업그레이드하면서 과제물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만드는 각종 출판물은 한층 세련되게 편집되었다. 그러나 밤새 작업한 글을 컴퓨터 조작 실수로 날리거나 바이러스 때문에 몇 년 동안 모아 놓은 글이나 정보를 한꺼번에 잃어버릴 위험도 높아졌다. 일부 학생들은 다른 사람의 과제물 파일을 적당하게 짜깁기한 후 편집만 새로 해서 자신의 과제물로 제출하는 문제를 일으켰다. 그 밖에 한자를 손으로 쓰지 않고 워드에서 쉽게 변환하면서 학생들의 한자 실력이 저하하는 단점도 생겼다.

컴퓨터와 함께 학생들의 생활을 크게 바꾼 것은 바로 인터넷이었다.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에는 PC 통신이 있었는데, 컴퓨터 내부에 모뎀을 달아 하던 PC 통신은 1996년경부터 활발하게 이용하였다. 특히 나우누리 통신방에는 총학생회를 비롯하여 각 학과 학생회, 학회, 동아리, 소모임 등이 게시판을 개설하여 학생들이 이런저런 의견을 올리고 때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그중 가장 인기 있던 게시판은 서울대학교 컴퓨터통신연구회(SCCR)였다. 이곳에는 서울대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교 외부 사람들까지 자주 드나들었고 서울대학교와 관련한 논쟁 글을 많이 올렸다. 서울대학교의 위상, 다른 학교와의 비교, 서울대인들의 의식과 심리적 특성, 서울대학교 내 각 집단 사이의 경쟁 의식 등이 주 논쟁 대상이었다. 또한 학생들끼리 시간을 정해 놓고 채팅을 하는 문화도 생

졌다.

1990년대 말에 가서 PC 통신은 이용료 없이 훨씬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인터넷에 자리를 내주었다. 인터넷은 많은 것을 변화시켰다. 그동안 학교에서 학생과 교수가 직접 만나 할 수밖에 없었던 수업을 인터넷 공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과제를 하려고 힘들게 도서관을 뒤지는 대신 인터넷 검색으로 짧은 시간 안에 더 많은 정보를 편리하게 얻을 수 있었다. 작성한 과제는 인터넷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였고 성적도 성적 입력과 동시에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를 사실 확인없이 마구 인용하거나, 심지어 다른 사람들의 몇몇 글들을 적당히 복사하여 짜깁기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독서량도 줄어들었다. 인터넷 정보의 홍수 속에서 공부의 질은 오히려 떨어졌다.

수업 이외의 학교 생활도 인터넷 공간에서 활발해졌다. 우선 서울대학교 메인 홈페이지, 서울대학교 도서관 홈페이지, '정보화포털 it4u' 등은 학생들이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학교 공식 사이트들이다. 반면 2002년 몇몇 학생이 만든 '스누라이프'는 인터넷 공간에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대표적인 서울대학교 관련 사이트이다. 스누라이프에서는 음식점, 하숙, 수강 신청, 강의, 연애 등 학생 생활과 직결된 정보를 교환하고 학내 쟁점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학교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고 솔직한 대화도 나눌 수 있다. 스누라이프 외에도 인터넷 신문 「스누나우」와 같이 인터넷 공간을 중심으로 벌이는 학생 활동이 활발해졌고, 총학생회, 대학신문사는 말할 것도 없고 각 학과, 동아리, 학회, 소모임 등의 수많은 커뮤니티가 여러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만들어져 있다. 학생 개개인들도 '미니홈피'와 '블로그' 등을 만들고 그곳에서 자신만의 인터넷 생활을 즐긴다. 하지만 인터넷 공간에서 하는 학교 생활이 순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2005년 초 서울대학교 도서관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네티즌들이 스누라이프에 가해자의 신상 정보를 게재하고 가해자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수백 건의 댓글을 달아 개인 정보 유출 문제와 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속도가 생명인 인터넷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의사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진지한 사고가 부족해지고 성찰하는 글쓰기가 약해졌다. 지나친 게임과 채팅 몰입으로 학업에 지장을 주기도 한다.

핸드폰과 인터넷이 대표하는 현재의 정보 통신 문화가 앞으로 학생 생활을 얼마나 더 변화시킬지 단언하기는 어렵다. 분명한 것은 정보 통신 문화가 대학 문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사실이다. 정보 통신 문화는 IT 산업, 미디어 산업, 전자 상



거래 등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대학 내 소비 문화의 확산을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핸드폰과 인터넷을 통해 형성한 학생들 사이의 네트워크는 정체성이 사라진 오늘날 대학 문화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 대학 문화의 주체는 핸드폰과 인터넷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이다.

#### 4) 동아리 활동의 변화와 대안적 학생 활동

학내 서클들은 1980년대 말부터 서클이라는 이름 대신 동아리라는 우리 고유의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 들어와 학내 동아리는 변화하는 학생들의 모습에 주목하고 이를 따라잡고자 노력하였으나 점점 다양해지고 전문화하는 학생들의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했다. 결국 동아리 중심의 학생 활동은 감각적이고 개인적인 학생들과 공감대를 만들지 못하고 그 빈 공간은 대중 문화가 차지하였다. 과거 대학 문화와 대중 문화의 명확한 대결 구도 속에서 확립한 대학 문화의 정체성은 점차 사라졌다. 이러한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 여러 가지 대안이 나왔다. 학내 동아리들은 기존의 화두였던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라는 문제 대신, 이제 ‘어떻게 소비할 것인가’를 고민하였다. 반면 일부 학생들은 스스로 욕구를 충족하려고 기존 동아리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활동을 모색하였다. 영화, 재즈, 힙합 분야의 동아리가 등장한 것은 학생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문화를 향유하기 위한 1990년대식 대안이었다. 단지 좋아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만으로 당당한 1990년대 학생들은 과거 선배들이 소수 문화, 하위 문화라는 이유로 외면하던 활동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러한 현상은 1990년대 대학 문화가 더 전문화하고 다양화하는 단초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언더그라운드, 인디펜던트 클럽, 소극장, 독립 영화 같은 소수 문화, 하위 문화를 대학 문화의 일부로 만들었다. 1998년 독립 예술제처럼 학생 개인들이 소규모로 시도하는 실험성 짙은 활동이 기존의 동아리 중심 활동보다 대학 문화에 더 큰 의미를 던져 주었다.

2000년대에 들어와 학생 활동의 변화 양상은 더욱 뚜렷해졌다. 무엇보다도 신입생들의 동아리 지원 경향이 변화하였다. 2002년 동아리연합회 소속 중앙 동아리 지원 현황을 보면, 우선 매체분과, 학술분과, 사회분과, 연행(演行)예술분과의 동아리 지원자가 예년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 반면 취미교양분과는 예년 수준의 지원율을 유지했는데, 그중에서 스윙·라틴댄스 동아리 ‘피에스타’는 3월 한 달 간 신입 회원이 70명이나 되

었다. 그 밖에 복싱 동아리 'FOS' 에도 40여 명이 신입 회원으로 가입했다. 이는 생각하는 것보다는 움직이는 것을, 고민하기보다는 즐기는 것을 선호하는 학생들의 경향을 반영했다. 또한 공과대학과 경영대학을 중심으로 만든 '서울대 학생 벤처 네트워크'와 '투자연구회' 등 벤처·투자 동아리들의 강세도 두드러졌다. 이는 학생들이 전공에 기반한 실용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활동에 더 관심이 많다는 것을 보여 준다.

2005년 현재 학생 활동의 양상은 동아리연합회에 등록된 중앙 동아리의 모습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동아리연합회는 크게 학술분과, 매체분과, 무예분과, 사회분과, 연행예술분과, 종교분과, 취미교양분과 등 7개 분과로 나뉘어 있고, 여기에 몇몇 가등록 동아리를 포함하고 있다. 학술분과에 속한 동아리는, 동양 철학을 공부하는 '고전연구회', 통일 문제를 공부하는 '맥박', 현대 북한을 공부하는 '우리넘기', 한국근현대사를 공부하는 '호우회', 사회 문제와 과학 기술 문제를 공부하는 '통합과학연구회', 마르크스주의를 공부하는 '프로메테우스' 등이 있다. 매체분과에 속한 동아리는, 만화 예술을 연구하는 '그림터', 영화를 연구하는 '알라성', 관악 캠퍼스의 방송을 담당하는 '방송연구회 S.U.B.', 언론 비평 웹진 '필화', 문학을 연구하는 '총문학연구회' 등이 있다. 무예분과에 속한 동아리는, 순수 무예를 수련하는 '기천', 전통 무예를 수련하는 '전통무예연구회', 태극권을 수련하는 '태극권연구회', 택견을 수련하는 '택견연구' 등이 있다. 사회분과에 속한 동아리는, 농민 관련 활동을 하는 '너름지기', 컴퓨터 관련 활동을 하는 '섬뜰사랑', 장애인 관련 활동을 하는 '손말사랑', 여성 관련 활동을 하는 '한울타리', 환경 관련 활동을 하는 '씨알', 유네스코 산하 활동을 하는 'KUSA', 동성에 관련 활동을 하는 'QIS' 등이 있다. 연행예술분과에 속한 동아리는, 마음을 하는 '골페', 노래를 하는 '메아리', 마당극을 하는 '마당패 탈', 재즈 댄스를 하는 '몰핀', 힙합 춤을 추는 '바운스 팩토리', 실용 음악 작곡을 하는 '사운드림', 국악을 하는 '여민락', 연극을 하는 '총연극회', 판소리를 하는 '추임새', 전통 춤을 하는 '한사위', 고전 기타 연주를 하는 '화현회', 합창을 하는 '합창단', 오케스트라를 하는 'SNUPO', 댄스를 하는 'HIS' 등이 있다. 종교분과에 속한 동아리는, 개신교 선교회인 '네비게이토', '밀알선교단', '총기독학생회', '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회', '한사랑선교회', 'CAM', 'CBA', 'C.C.C', 'JOY선교회', 'SFC', 'UBF', 'YWAM', 가톨릭 선교회인 '울톨릭', 불교 선교회인 '수행불교회', '총불교학생회', 원불교 선교회인 '원불교학생회', 증산도 선교회인 '증산도학생회' 등이 있다. 취미교양분과에 속한 동아리는, 여행 동아리 '괴나리', 역사 기행 동아리 '노뚝돌', 애니메이션 동아리 '노이타미나', 마술 동아리 '夢幻(몽

환), 바둑 동아리 '바둑부', 서예 동아리 '서예회', 수영 동아리 '스누폴', 생태 여행 동아리 '야생조류연구회', 사진 동아리 '영상', 천문 동아리 'AAA', 국제 학생 교류 동아리 'AIESEC', 'ISA', 영어 동아리 'EHSA', 스윙과 라틴 댄스 동아리 '피에스타', 무선 동아리 'HAM', 농구 동아리 'HOBAS', 재즈 동아리 'JIVE', 컴퓨터 동아리 'SCSC' 등이 있다. 그밖에 가등록 동아리로는 여성주의 문화 집단 '난리부르스', 환경 동아리 '녹색회', 마술 동아리 '美動(미동)', 스키 동아리 '서울대스키부', 보드게임 동아리 '어울놀이', 문예 창작 동아리 '참', 기독교 선교회 'IVF', 스노우보드 동아리 'SNURFER', 인터스키 동아리 'WET' 등이 있다. 2005년 동아리연합회 등록 동아리들을 10년 전인 1995년과 비교해 보면, 한국 사회, 근현대사, 민족 문화 등을 연구하는 학술분과 동아리가 대폭 줄어든 대신 대중음악, 댄스, 애니메이션, 마술, 스포츠 등에 관심을 갖는 취미 교양분과, 연행예술분과 동아리가 크게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여성 문제와 동성애 문제를 다루는 동아리도 생겨났다.

동아리 활동의 변화와 더불어 학과나 반 단위에서는 각종 문화 소모임이 생겨났다. 동아리보다 규모도 작고 체계도 엉성하였지만, 각종 문화 소모임은 소비 문화의 확산 속에서 학생들 스스로 대안적인 대학 문화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시도였다. 1997년 『대학신문』의 조사에 따르면 각 학과나 반에는 평균 2개 정도의 소모임이 있었다. 영화, 사진 등을 다루는 영상 소모임이 가장 많았고, 사회, 철학, 역사 등의 주제를 다루는 세미나 소모임이 두 번째로 많았다. 특히 영화, 대중음악, 애니메이션 등을 다루는 대중문화 소모임이 증가하는 것은 대학 문화의 흐름을 반영하는 현상이었다. 대학의 문화 활동은 사회 비판적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과거의 강박이 사라지고,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관심 있는 영역을 부담 없이 즐기려는 흐름이 강해졌다. 대부분의 소모임은 특정 분야에 적극적 관심을 가진 몇몇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만큼 부담을 느끼면서 활동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구성원들의 참여 여부도 자유로운 편이었다.

대중 문화 소모임이 양적으로 증가하고 활성화했지만, 이것이 대안적인 대학 문화의 생산으로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문화 지식을 습득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향유하겠다는 소박한 목적으로 시작한 모임이 많아, 학생들만의 특성을 담은 문화를 창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대중 문화의 유행에 편승해 부침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았고 구성원을 안정적으로 충원하지 못하여 모임의 수명도 짧았다. 한마디로 1990년대 유행한 대중 문화 소모임은 자족적 폐쇄성을 지닌 경우가 많았고 소비적 소수 문화의 외피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러한 문화 소모임의 자족적 성격과 짧은 생명력을 극복하고자

비슷한 성격의 소모임끼리 연대하는 경우도 있었다. 영화 관련 소모임들은 영화 관련 중앙 동아리인 ‘씨네꿈’, ‘알라성’ 등과 연계하여 ‘관악영화연대모임’을 만들었고 신입생 환영 영화제나 화요 영화제 등 각종 행사를 벌였다. 밴드 소모임들은 외부의 밴드와 연계하여 록 페스티벌 행사를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문화 소모임의 한계를 완전히 극복한 것은 아니다.

1990년대 전반까지 매년 3천여 명 정도 참여하면서 활발하던 농활(학생 농민 연대 활동)도 2000년대로 넘어가면서 규모나 의미가 크게 축소하였다. 2003년의 경우 1천2백여 명이 충남 일대 8개 시군의 62개 마을을 찾았는데 이는 5년 전에 비해 규모가 절반으로 준 것이다. 학생 참여가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농활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변화였다. 학생들은 농활을 학생과 농민의 연대 활동이라기보다 노동의 소중함을 배우면서 농민들을 돕는 봉사 활동 정도로 생각했다. 방학을 자신을 위해 투자하려는 학생들은 농활에 참여하는 대신 계절 학기 수업을 듣거나 해외 여행, 어학 연수 등을 떠났다. 하지만 학생들의 인식은 이렇게 달라졌으나 농활의 형식이나 내용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또한 학생들 사이에서 운동권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면서 운동권 중심의 농활을 기피하는 현상이 벌어졌다. 여성주의가 확산하면서 농활 과정에서 학생과 농민이 충돌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도 농활이 쇠퇴한 이유 가운데 하나였다. 2001년과 2004년에는 성폭력 문제 때문에 농활대가 중도에 철수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농활이 쇠퇴하자 학생들은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부터 농활 이외에도 공장에서 노동자들과 함께 일하는 ‘공활’(학생 공장 활동), 철거촌에서 빈민들과 함께 생활하는 ‘빈활’(학생 빈민 연대 활동)이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공활과 빈활은 농활보다도 먼저 침체되었다. 단, 서울대학교 주변 봉천동 곳곳이 재개발되던 1990년대 전반기에는 봉천동 철거민들과 연계한 빈활을 비교적 활발하게 벌였다. 공활과 빈활보다 학생들의 관심을 끈 것은 ‘환활’(환경 현장 활동)이었다. 1995년 처음 시작한 환활은 지금까지 계속되며, 최대 천명 정도 학생이 참가할 정도로 안정적인 기반을 확보하였다. 환활은 1995년 굴업도 핵 폐기장 반대 운동의 일환으로 전개한 반핵 농활에서 출발했다. 학생들이 핵 폐기장 건립 반대 운동을 활발하게 벌이는 지역으로 농활을 간 것은 당시 농활에서 드러나기 시작한 관성과 비실천성을 극복하려는 시도였다. 즉, 일반 농촌이 아닌 지역 주민 운동이 활발한 지역으로 현장 활동을 가서 더 실천적인 의미의 학생 농민 연대 활동을 하려 했다. 실제로 노동력 봉사보다는 지역 주민의 반핵 운동에 연대하는 일이 학생들의 주된 활동이었다. 이후 반핵 농활은 ‘자본에 의한 환경 파괴에

맞서는 활동'으로 문제의식을 확장하면서 본격적인 환경 현장 활동으로 발전하였다. 환활은 핵 관련 사안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환경 관련 사안을 다루면서 활동 범위를 넓혔다. 1996년에는 고성, 영광, 월성의 반핵 운동에 동참했을 뿐만 아니라, 골프장 건설 지역이나 소각장 건설 지역에서도 활동했다. 1997년에는 영광, 월성, 울진의 핵 발전소 건설 지역과 영흥도 화력 발전소 건설 지역, 가야산과 남양주의 골프장 건설 지역, 포천의 소각장 건설 지역에서 활동했다. 환활의 성공에 힘입어 학생들은 이후 다양한 현장 활동, 체험 활동을 시도하였다. 2001년부터 간호 현장 활동, 기지촌 현장 활동을 벌였으며, 최근에는 생활협동조합 학생위원회의 주관 하에 교내 식당에서 노동을 체험하는 식당 체험 활동(식활)이 진행 중이다. 이렇듯 농활의 대안 활동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과거 농활만큼 대중성과 지속성을 확보한 학생 활동은 찾기 힘들다. 명확한 목적 의식과 더불어 대중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대안적 학생 활동의 과제다.

### 5) 서울대생의 일상과 녹두거리

대학 문화는 학생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형성된다. 2004년 『대학신문』이 조사한 것을 보면 서울대생의 53.5%는 하루에 한 끼 이상을 거르며 아침 식사를 가장 많이 걸렀다. 남녀 모두 시간이 없거나 귀찮아서 끼니를 거르는 사람이 많았지만, 남학생의 경우 돈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그 뒤를 이은 반면 여학생의 경우 다이어트가 그 뒤를 이었다. 다이어트 열풍에서 서울대학교 여학생도 예외가 아니었다. 음주는 87.5%가 하고, 월 2~4회 술자리를 갖고 한 번의 술자리에서 3~4잔이나 10잔 이상의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 성인의 평균 음주 습관과 비교하면 학생들은 일반인보다 술을 자주 많이 마시고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 학생들에 비하면 2000년대 학생들의 주량은 많이 줄어들었다. 음주는 대부분 개강 파티나 MT와 같이 다수가 모이는 자리에서 했다. 흡연의 경우 흡연자가 전체의 20%정도였는데 남학생은 31.8%가, 여학생은 10.1%가 흡연자였다. 이 수치를 일반인과 비교하면 남학생의 흡연 비율은 일반인의 절반 수준이지만 여학생은 흡연자의 비율이 2배 이상 높았다. 하루에 소비하는 담배 양은 반 갑에서 한 갑 사이가 가장 많았다. 또한 36.6%가 운동을 하지 않았고 38.4%는 건강을 위해 아무 것도 하지 않았으나, 72.1%는 자신의 건강이 보통 이상이라고 생각했다.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놀이 가운데 독특한 것으로 '뺨 차기'가 있다. 1988년 1학

기 무렵부터 성행하기 시작한 팩 차기는 빈 우유 팩을 제기 차듯이 찬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적게는 서너 명, 많게는 십여 명이 원형으로 둘러서서 마시고 남은 빈 우유 팩을 그대로 차거나, 아니면 우유팩 두 개를 서로 붙이고 다시 그 위에 테이프를 감아 내구성을 높인 뒤에 찼다. 학생들은 조금만 공간이 있으면 어디서든 팩 차기를 했으며 특히 도서관 주변에서 많이 했다. 태권도가 한국의 국기(國技)라고 한다면 팩 차기는 당시 다른 학교에서는 보기 힘든 서울대의 교기(校技)였다. 놀이와 운동을 위한 공간이 부족한 교내에서 팩 차기는 학생들이 쉽게 모여 할 수 있는 간단한 놀이 운동이었다. 그러나 팩 차기가 대학생다운 패기나 건강함을 찾기 힘든 나른하고 수동적인 놀이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있었다. 또한 여러 사람들이 모여 아무 공간에서나 하는 팩 차기는 소음을 일으키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기도 했다. 2000년대에 들어와 팩 차기 유행은 한 풀 꺾였지만, 지금도 여전히 관악 곳곳에서 팩 차기 하는 학생들을 발견할 수 있다. 팩 차기와 함께 많은 학생들이 즐기던 족구는 1990년대 체육 대회 종목으로 들어갈 만큼 인기가 많았지만, 행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아지고 족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점차 사라지면서 2000년대 이후 거의 자취를 감췄다.

학생들의 일상과 관련하여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교통 문제이다. 서울대학교의 특징 중 하나가 일반 시내버스가 교내로 들어오고 학교 안을 순환하는 버스가 별도로 있다는 점이다. 1990년대 초반까지는 교문 밖에서 학생들을 수송하는 외부 셔틀 이외에 교내를 순환하는 버스가 필요하지 않았다. 기숙사를 제외하고 학교의 대부분이 걸어서 10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교의 규모가 계속 커지면서 순환 도로 외곽 곳곳에 대학원 연구동을 비롯해 많은 건물이 들어서자 상황이 달라졌다. 캠퍼스 확장에 따라 버스 노선을 점점 교내 안쪽까지 연장했다. 일례로 낙성대에서 올라오는 마을 버스의 반환점은 처음에 후문 앞이었다가 점차 기숙사 삼거리 앞, 노천 극장 앞 등으로 연장하였고 현재는 공과대학 301동 앞이 되었다. 이렇게 버스가 학교 안까지 들어오기는 했지만, 캠퍼스가 계속 커지자 버스를 타고 온 학생이 걸어 다녀야 할 거리도 자꾸 늘어났다. 과거와 달리 물질문명의 혜택을 많이 받고 자란 신세대 학생들은 걸어 다니는 거리가 길어지는 것에 불만이었다. 또한 많은 학생들을 수송하기에 버스의 숫자가 턱없이 부족해서 학생들은 매일 정류장에서 장시간 동안 길게 줄을 서고 콩나물시루와 같은 만원 버스에 시달려야 했다.

그러자 1990년대부터 학생들은 승용차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본부에 등록된 차량의 숫자만 보면, 1990년 260대 정도에 불과했던 학생 자가용 승용차가 1995년 2,500여 대

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학생 승용차가 교직원 승용차보다 1천여 대 이상 많은 숫자였다. 학교 내 주차난은 심각해졌다. 결국 1995년 학부생들의 차량 진입을 금지하였다. 각 진입로에는 차단기를 설치하고 진입을 허가하는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학생들이 스티커를 위조하여 사용하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있었다. 대신 학부생 차량 진입 금지에 따른 불편을 덜기 위해, 1995년 2학기부터 교내에 413번(현재의 5512번) 순환 버스를 새로 운행했다. 그 결과 2006년 현재 교내에는 순환 셔틀 6대와 외부 셔틀 20대 외에도 5511번, 5512번, 5513번, 5516번, 5518번 시내버스가 교내를 순환하고 있으며, 낙성대에서 출발하는 02번 마을 버스도 계속 운행하고 있다. 비록 이전보다 많은 버스가 학교 안으로 들어오지만 수많은 학생들을 원활하게 수송하기에는 아직도 수가 부족하다. 아침마다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과 낙성대역 주변 버스 정류장에 길게 늘어선 줄과 만원 버스는 예나 지금이나 서울대생이면 누구나 경험하는 일상의 괴로움이다.

1990년대 전반기에 학생들의 자가용 이용이 늘어나게 된 것은 과외를 통해 두둑해진 학생들의 주머니 사정과도 연관이 있었다. 1970년대까지 성행했던 과외는 대학생들, 특히 서울대생들의 주요 수입원이었다. 그러다가 1980년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정권은 과외를 전면 금지하였다. 하지만 학생들이 생계비와 학자금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던 상황에서 과외 금지란 무의미했다. 1980년대에도 비밀리에 과외를 하는 이른바 몰래바이트가 성행했다. 1987년의 경우 학생들은 일주일에 2시간씩 2번 과외 수업을 하고 한 달에 보통 20~30만 원을 받았다. 서울대생들에게 이 액수는 한 학기 등록금의 절반 정도를 마련할 수 있는 큰 액수였다. 비현실적이었던 과외 금지 조치는 결국 1989년 폐지되고 과외가 전면적으로 부활하였다. 과외 금지 조치가 폐지되자 1990년대부터 많은 학생이 대거 '과외 전선'에 뛰어들었다. 학생들 가운데는 한꺼번에 여러 개의 과외를 하면서 큰 돈을 버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과외로 풍족해진 신세대 학생들의 소비가 늘면서 대학 문화에 소비 문화가 퍼져 나가는 속도도 점차 빨라졌다.

학생들의 주머니 사정이 좋아지고 소비 성향이 강해지면서, 학생들의 생활 터전이던 녹두거리도 1980년대와는 다른 모습으로 변해 갔다. 우선 1989년경부터 녹두거리 주점들에 변화가 생겼다. '탈', '스페이스' 등 이른바 "민주주의 주점"이 문을 닫고, 생맥주를 판매하는 호프집이 많이 생겼다. 1990년에 들어와서는 주점 대신 각종 편의점과 커피 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이 새로 자리를 잡았다. 녹두거리에 소비 문화가 퍼진 것은 학생들의 개인주의화와 깊은 관련이 있었다. 1980년대 녹두거리가 폭압의 시대의 '해

방구' 역할을 했을 때, 학생들은 어느 과, 어느 학번 그 누구와도 술친구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학생들이 급격하게 개인주의화, 소그룹화하고, 고민도 집단적이고 공동의 것에서 개인적이고 소비적인 것으로 바뀌면서, 학생들 사이의 일체감은 약해지고 개인의 기호는 다양해졌다. 1990년대에도 학생들이 '태백산맥'이나 '한마당' 같은 주점을 공동체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긴 했지만, 녹두거리에는 점차 고급 호프집과 레몬 소주, 칵테일 등을 판매하는 신세대 주점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여럿이 진을 치고 앉아 노래를 부르고 토론을 할 수 있는 주점보다는 끼리끼리 앉아 분위기를 낼 수 있는 주점과 카페를 학생들은 선호했다. 주종(酒種)이 바뀐 것처럼 세대가 바뀌었다. 민중 가요와 '뽕짝'을 부르던 세대가 점차 사라지고 김건모와 서태지를 따라 부르는 세대들이 녹두거리의 주인공이 되었다. 주점만 변한 것이 아니었다. 1980년대 사회 과학 붐을 주도했으며 학생 운동과 실천 지성의 산실이던 사회 과학 서점들은 하나 둘씩 문을 닫았다. 1992년 '열린 글방', 1996년 '전야'가 문을 닫았고 '그날이 오면'만 지금까지 홀로 버티고 있다.

소비 문화가 확산하면서 1990년대 중반부터 녹두거리는 '녹두베가스'라는 달갑지 않은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신림 사거리뿐만 아니라 신촌, 강남 등 다른 지역에서 녹두거리로 놀 곳을 옮긴 사람들 때문이었다. 1990년대 초중반기에는 자정 이후 주점 영업이 법으로 금지되었다. 그러나 대학가의 특성상 녹두거리 주점들은 불법이지만 심야 영업을 계속했다. 그런데 녹두거리에 다양하고 고급스러운 주점이 많아지자, 다른 지역에서 놀던 조직 폭력배, 오토바이 폭주족, 10대 청소년들이 자정 이후에도 계속 유흥을 즐기기 위해 녹두거리로 몰려들었다. 심지어 일부 주점은 조직 폭력배가 직접 운영한다는 소문도 있었다. 그만큼 녹두거리는 더 화려해졌지만 녹두베가스라는 오명처럼 대학가보다는 유흥가에 더 가까워졌다. 이에 학생들은 1993년 2학기부터 자체적으로 규찰대를 만들어 심야 녹두거리의 질서를 잡고자 노력했지만, 조직 폭력배에게 위협을 당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일부 학생들의 노력만으로는 녹두거리에 확산되는 소비 문화를 막을 수 없었다. 비록 1990년대 후반 심야 영업 제한이 풀리면서 녹두거리의 질서는 어느 정도 회복되었지만 한번 퍼진 소비 문화의 기세는 좀처럼 꺾일 줄을 몰랐다.

1996년 당시 녹두거리에는 모두 350여 개의 상점이 있었다. 그중 호프집과 소주방이 70여 개, 분식집 등 식당이 60여 개, 당구장이 30여 개, 비디오방과 노래방이 각각 20여 개, 커피숍 20여 개, 나머지는 고시원, 편의점 등이었다. 반면 서점은 '광장서적'과 '그날이오면' 등 손에 꼽을 수 있는 정도에 불과했다. 1990년대 이후 녹두거리가 완전히



유흥가로 변했음을 여실히 보여 준다. 1994년 이른바 사범 개혁으로 고시생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녹두거리 고시촌 역시 크게 확장했다. 과거 학생들의 하숙집, 자취방으로 이용하던 주택들이 점차 고시원이나 학원 같은 상가로 바뀌었고, 고시생들의 생활과 유흥을 위한 상점이 더욱 늘어났다. 이제 녹두거리는 서울대학교의 대학가라기보다 한국 최대의 고시촌으로 더 유명해졌고, 대학 문화가 아닌 고시 문화의 터전이 되었다.

1996년 5월 『대학신문』 조사에 의하면 녹두거리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은, 호프집(24%), 소주방(13%), 당구장(13%), 분식점 등 식당(12%), 서점(7%) 순이었다. 또 녹두거리를 이용하는 학생 가운데 절반 정도는 녹두거리가 학교에서 가깝기 때문에, 또 20% 정도는 심야 영업을 하기 때문에 자주 찾는다고 응답하였다. 곧 학생들에게 녹두거리는 먹고 마시고 유흥하기 위해 찾아가는 공간이었다. 실제 학생들 가운데 82%는 녹두거리가 향락적이고 퇴폐적이라고 지적하면서 시급히 녹두거리의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990년대 녹두거리에서 벌어지는 활동 가운데 대학가의 특징을 담은 것으로는 신입생 환영회, 개강 모임, 종강 모임, 그리고 카페에서 벌어지는 세미나 등이 고작이었다. 이처럼 녹두거리는 대학가의 본래 이상과는 동떨어진 소비 문화의 거리로 전락하였다. 물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녹두 문화제’ 등을 시도하였으나, 녹두거리에 만연한 소비 문화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녹두거리는 유흥가로 변신하여 학생들을 유혹하지만 2000년대를 지나면서 녹두거리를 찾는 학생들의 발길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는 단지 과거에 비해 각종 학생 모임이 줄어들고, 학생들이 술을 적게 먹어서 그런 것만은 아니다. 명동, 신촌, 압구정, 강남역 같이 소비 문화가 발달한 거리들을 닮아 가는 녹두거리가 대학가 본연의 특성을 잃어가면서 ‘경쟁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소비 문화에 길들여진 오늘날 학생들의 기호를 따라 녹두거리가 녹두베가스로 변신한다 하더라도, 녹두거리가 명동이나 압구정 같은 지역과 경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교통도 불편하고 외진 녹두거리가 대학가에서 소비 문화의 천국으로 변신한 신촌이나 대학로의 모습을 꿈꾸는 것은 헛된 망상에 불과하다. 이미 학생들은 교통이 편리하고 급속하게 변화해진 서울대입구역 주변으로 옮겨 가고 있다. 녹두거리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은 잃어버린 대학가의 정체성을 되살려 녹두거리만의 특성을 차별화하는 길이다. 이를 위해서는 녹두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학생들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건강한 토양에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듯이, 21세기 서울대학교의 대학 문화도 바로 건강한 대학가와 함께할 때만 꽃필 수 있다.

서울대생의 대학 문화를 크게 4시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설립 이후 1950년대까지 대학 문화의 특징은 '낭만성'이다. 분단, 전쟁, 가난, 독재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실존주의와 같은 외국 문화 수용을 통해 낭만적 정열을 가꾸었다. 외국 문화 수용은 기성 사회의 문화와 구별되는 독자적인 대학 문화를 창조하려는 시도였다. 특히 대학가 다방은 낭만적 대학 문화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4·19 혁명 이후 종합화 이전까지 대학 문화의 특징은 '비판 의식'이다. 이 시기에는 낭만적 대학 문화와 사회 비판 의식이 공존하였다. 4·19 혁명을 경험한 학생들은 민족주의를 고양하고 사회 참여를 확대했다. 1970년대 정치적 억압이 강화되면서 사회 참여가 제한되자 학생들은 청년 문화와 민속 등을 통해 저항 에너지를 분출했다. 또한 종합화 이전에는 학생들이 단과대학을 중심으로 정체성을 형성하였다. 종합화 이후 1980년대까지 대학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은 '공동체 의식'이다. 종합화와 관악 캠퍼스 이전은 단과대학 중심의 정체성을 약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반면 운동권 문화의 확산과 전통 문화의 집단성에 대한 관심은 서울대생의 대동(大同)을 가능하게 했다. 운동권 문화, 공동체 문화에 바탕한 대학 문화는 대중 문화와 구별되는 대항 문화로 성장하였다. 1990년대 이후 현재 대학 문화의 특징은 '소비성'이다. 학생들은 개별화, 보수화되었고 대학은 대항 문화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대중 문화를 소비하는 시장으로 변했다. 그 결과 대학 문화는 독자적인 정체성을 상실하였다. 소수 문화, 언더 문화 등 대학 문화의 다양성은 커졌지만 이들이 대학 문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크지 않다. 중요한 것은 '주체'이다. 과거에도 소비 문화는 언제나 대학 문화의 한 부분으로 존재하였지만, 대학 문화는 시대별로 특징이 변화하는 가운데서도 독자적인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 문화를 주체적으로 향유하려는 학생들의 지속적인 노력 덕분이었다. 대학 문화의 정체성을 상실한 지금 그 노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 제2장 학생회의 변천

대학은 학생들을 교육하는 기관이지만 학생들은 단순한 피교육자가 아니다. 학생들은 대학의 주체로서 학교 생활을 스스로 꾸려나갈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학생회는 이러한 학생들의 학내 자치를 책임지는 대표적인 조직이다. 서울대생들도 그동안 학과, 단대, 전교 단위에서 학생회를 조직하였다. 그러나 학생회가 걸어온 길은 결코 평탄치 않았다. 정치적인 격변으로 인해 학생회는 존폐를 반복했고 학생회 조직과 운영 과정에서 학교 당국과 많은 마찰을 일으키기도 했다. 한때 학내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학생 운동의 중심으로 성장하기도 했지만 최근 학생회는 학생들의 무관심 속에서 다시 위기를 맞고 있다. 이 글에서는 지난 60년간 학생회의 변천 과정을 기존 교사와 학보 『대학신문』, 교지 『관악』, 학생잡지 『서울대저널』, 기록관 구술 자료, 학생회 문건, 일간지, 연구성과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제1절 학도호국단 창설과 학생 동원(1946~1960년)

### 1) 건설학생회 결성과 학도호국단 창설

1946년 국립서울대학교를 처음 설립하기 전부터 서울대학교로 통합될 대학과 전문학교 학생들은 8·15 해방과 ‘신탁 통치 파동’ 등 정치적 격변을 거치면서 좌익과 우익으로 나뉘어 갈등을 빚었다. 이러한 좌우 학생 대립은 학생 조직의 결성에도 영향을 주었다. 먼저 1946년 1월 7일 우익을 대표하는 학생들이 반탁전국학생연맹(이하 반탁학련)이라는 조직을 결성하고 반탁 운동과 반공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에 대항하여 좌익을 대표하는 학생들은 1월 9일 재경학생행동통일촉성회(이하 학통)라는 조직을 결성하고 모스크바 3상 회담 지지 운동을 벌였다. 반탁학련과 학통은 모두 각 학교 대표자가 모여 만든 연합 조직이었고 중앙 조직을 먼저 만든 후 각 학교로 조직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경성대학의 일부 우익 학생은 반탁학련 중앙 집행부에 불만을 품고 1946년 4월 경성대학동지회라는 학내 자치 조직을 별도로 결성하였다. ‘국립서울대학교설립안’(이하 국대안)을 발표한 직후인 1946년 7월 31일 반탁학련과 경성대학동지회 등이 통합하여 전국학생총연맹(이하 전국학련)을 결성하지만, 새로 설립한 서울대학교의 우익 학생들은 전국학련의 결성 과정에서 벌어진 일부 주도 세력들의 패권적이고 분파적인 행동에 반발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1946년 7월 13일 국대안을 발표하자 좌익 학생들의 연합 조직인 학통은 7월 22일 국대안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8월부터 각 학교별로 국대안반대투쟁위원회를 조직하여 본격적인 국대안 반대 운동에 나섰다. 3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국대안 반대 운동은 학통에 속한 좌익 학생이 주도하였고 서울대로 통합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 학생들도 다수 참여하였다. 학생들의 주된 운동 방법은 동맹 휴업이었다. 학통을 중심으로 전개하는 국대안 반대 운동과 동맹 휴업에 맞서 서울대로 통합되는 우익 학생들도 새로운 조직을 만들었다. 1947년 2월 9일 각 단과대학을 대표하는 우익 학생 50여 명이 모여 ‘국립서울대학교 건설학생회’(이하 서울대건설학생회)라는 교내 자치 조직을 결성하고 동맹 휴업을 지지하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서울대건설학생회에는 좌익 학생 조직인 학통에 대항하고 기존 우익 학생 조직인 전국학련의 독단적 운영에 반대하는 서울대학교 우익 학생들이 총집결하였다. 서울대건설학생회는 좌익 학생들의

동맹 휴업을 반대하였지만 국대안을 무조건 지지하지는 않았다. 서울대건설학생회는 결성과 함께 발표한 결의문에서, 국립서울대학교의 행정권을 한국인에게 이양하고, 문리과대학, 상과대학, 법과대학 등 3개 단과대학의 휴교 명령을 철회하며, 교수진과 학교 설비를 확충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후 건설학생회는 동맹휴업이 벌어지는 다른 학교들에서도 속속 결성하였고, 2월 28일 각 학교에서 결성한 건설학생회들이 연합한 전국건설학생총연맹(이하 건설학련)을 결성하였다.

서울대건설학생회는 서울대 내의 학통 학생들과 대립하였다. 1947년 3·1절에 좌익과 우익은 따로 기념행사를 가졌고, 서울대생들도 좌익과 우익으로 나뉘어 각각의 행사에 참여하였다. 그 과정에서 서울운동장에 모인 건설학생회 중심의 우익 학생들과 남산에 모인 학통 중심의 좌익 학생들 사이에서 서울대학교 교기를 둘러싼 쟁탈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한 건설학련은 같은 우익 학생 조직인 전국학련과 대립했다. 건설학련에는 한민당(한국민주당)과 이승만에 밀착한 전국학련 지도부의 독단적 행동에 불만을 품은 학생이 다수 참여하였다. 때문에 두 조직의 갈등이 심했고 물리적 충돌도 심심치 않게 일어났다. 심지어 건설학련 학생들이 전국학련 사무실로 몰려 가는 과정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1947년 3월 국대안 수정안이 나오고 한국인 총장을 임명하면서 ‘국대안 파동’은 점차 진정되었다. 그리고 8월 미등록 학생 약 3,500명이 복교하여 국대안 파동은 마무리되고 학교는 안정을 찾았다. 반면 학통은 불법화되고 약 1천 명 정도의 학통 소속 좌익 학생들이 자퇴 및 미복학 형식으로 학교를 떠났다. 서울대건설학생회가 학통 학생들과 벌인 대립에서 승리한 것이다. 그러나 1948년 8월 15일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하면서 서울대건설학생회도 해산했다. 반공을 국시(國是)로 정한 이승만 정권은 학생들의 좌익 활동을 용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강력한 사상 통제 정책을 시행하여 서울대건설학생회를 비롯한 기존 우익 학생 조직도 모두 해산시켰다. 대신 국가가 학생 조직을 직접 통제하기 위해 군대식 편제를 갖춘 학도호국단을 창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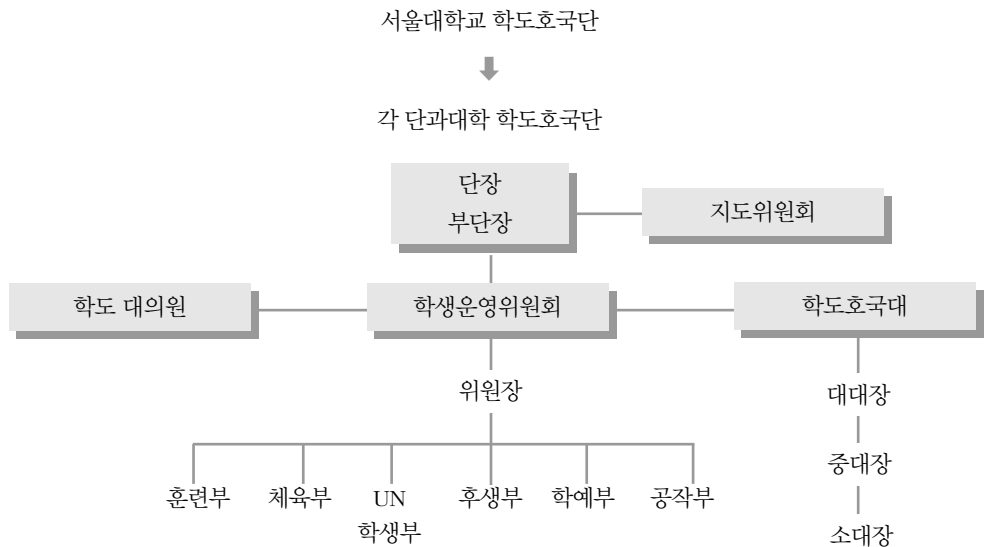
학도호국단 창설은 1948년 10월부터 초대 문교부 장관 안호상이 본격 추진하였다. 1948년 11월 문교부는 중학생 이상의 학도호국대를 조직하여 군사 훈련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고 12월에 ‘학도호국단 준비 및 지도 요강’을 작성하였다. 1949년 1월에는 ‘학도호국단 조직 요강’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1월 말까지 중등학교(현재의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도호국단을 결성하였고, 2월에 시 군 학도호국단, 3월에 각 도 및 서울특별시 학도호국단을 결성하였다.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각 대학 학도호국단은 중

양학도호국단 직속으로 4월 20일까지 조직을 완료하였다. 4월 22일에는 서울운동장에서 대한민국 학도호국단 총재 이승만 대통령과 단장 안호상 문교부 장관을 비롯하여 전국의 학생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중앙학도호국단 결성식을 가졌다.

창단 당시 조직 체계를 보면 중등학생 이상 모든 학생과 교직원은 학도호국단 단원이었다. 총재는 대통령이, 중앙학도호국단 단장과 부단장은 문교부 장관과 차관이, 각 도 및 서울특별시 학도호국단 단장은 도지사, 시장, 교육감이, 각 학교 학도호국단 단장은 교장, 학장, 총장이 맡았다. 학생 간부는 학도부장 또는 대대장으로 임명하였다. 이렇듯 학도호국단은 그 조직 체제가 대통령-문교부-총장 학장 교장으로 된 전형적인 관변 조직이었다. <표 5-2-1>에서 볼 수 있듯이, 서울대학교도 9개 단과대학에 각 단과대학 학도호국단을 결성하고 그 연합체로서 '서울대학교 학도호국단'을 결성하였다. 그리고 각 단과대학 학장이 단과대학 학도호국단 단장을 맡았고, 총장은 서울대학교 학도호국단장을 맡았다. 학생운영위원장은 단장이 임명하였다. 학생운영위원회 산하에는 훈련부, 체육부, UN학생부, 후생부, 학예부, 공작부 등 6개 부서와 함께 대대-중대-소대로 이루어진 학도호국대가 있었다.

학도호국단의 취지를 보면, “우리나라는 국토의 양단(兩斷)과 사상의 분열로 인하여

<표 5-2-1> 서울대학교 학도호국단 조직도



출전: 서울대학교, 1996 『서울대학교 20년사』

사회적·문화적 혼란을 일으키어 동족상쟁(相爭)의 비애를 초래하여 바야흐로 민족 존망(存亡)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민족이 정기를 양양하여 민족 본연의 자태로 돌아가서 사상을 순화·통일하고 완전 자주독립을 전취(戰取)하여야 하겠다. 이에 민족의 핵심체이며 추진체인 학도층의 사상통일과 유기적 조직단체적 훈련을 강화하여 신체를 단련하고 정신을 연마하여 학원을 수호하며 향토를 방위하고 나아가서는 국가를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실천력을 함양하고자 학도호국단을 조직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로 학도호국단을 결성한 목적은 학교 내 좌익 학생들을 제거하고 학내에 생길지 모를 좌익 사상을 근절하기 위해 군대식 집단 훈련과 반공 사상 교육을 시켜 학생들의 몸과 마음을 국가가 직접 통제하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초기의 학도호국단 간부진의 85%는 반공 사상이 투철한 전국학련 출신 학생으로 채웠고, 서울대학교의 경우 기존 건설학생회 출신 학생들이 학도호국단의 주축을 이루었다.

학생들이 학도호국단과 같은 준군사 조직으로 편제되면서 학생들의 학문적, 사상적 자유와 자치 활동은 크게 제약받았다. 학생들의 자유와 자치를 가로막는 학도호국단 창설에 대해 국회는 물론 그 동안 우익 학생 조직의 대표 역할을 하던 전국학련까지 크게 반발했다. 독일 나치가 조직한 학생 조직 ‘유겐트(Jugend)’와 같이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1949년 9월 27일, 학도호국단 이외의 학생 단체는 존재할 수 없고 학생들은 학도호국단을 통해서만 활동해야 한다는 ‘대한민국학도호국단규정’을 만들어 대통령령으로 공포하였다. 조직 해체에 반발해 오던 전국학련도 정부의 방침에 따라 1949년 11월 자진 해산하고 학도호국단에 완전히 흡수되었다. 이후 학도호국단은 이승만 정권의 학생 통제·동원 수단으로 전락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학도호국단을 매개로 여러 활동을 전개하면서도 학생 자치를 가로막는 학도호국단의 해체를 주장했다.

## 2) 학도호국단의 활동과 학생 동원

1949년 학도호국단을 창설하였지만 곧이어 발발한 한국전쟁으로 학생들이 흩어지자 학도호국단은 별다른 활동을 하지 못했다. 대신 각지로 흩어진 학도호국단 간부는 국방부 정훈국의 지원 하에 대한학도의용대를 조직하여 전쟁에 참전하였다. 대한학도의용대를 통해 국방부가 학생 조직에 영향을 끼치자, 이에 반발한 문교부는 1951년 8월 ‘대

한민국학도호국단개정안'을 공포하여 학도호국단을 정부 주도의 준군사 조직에서 개별 학교 중심의 학생 자치 조직으로 개편하였다. 이는 이전부터 제기한 학도호국단의 파시즘적 성격에 대한 비판과 학생들의 자치 조직에 대한 요구를 반영한 조치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서울대학교에서도 학도호국단 학생운영위원장을 학생들이 직접 선출하기 시작하고 각 단과대학마다 집행 기구인 운영위원회를 감시하기 위해 대의원회를 조직하였다. 학도호국단 운영위원장 선출은 1953년 사범대학에서 처음 실시하였고 1954년부터 각 단과대학에서 직선 또는 간선으로 실시하였다. 법과대학, 사범대학, 수의과대학의 운영위원장은 직선으로 선출하였고 나머지 단과대학은 대의원회에서 선출하였다. 그중 공과대학과 문리과대학은 1956년부터, 미술대학과 농과대학은 1957년부터 직선제로 선출하였다. 대의원회는 각 학과에서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하여 운영위원회의 간부 선임을 추인하고 예산과 결산을 심의하며 단과대학에 따라 운영위원장도 선출하였다.

서울대학교 학도호국단에는 단과대학 운영위원장으로 구성하는 운영위원회가 있었다. 서울대학교 학도호국단 운영위원장은 단과대학 운영위원장들이 순번제로 맡았다. 그리고 심의기관인 '서울대학교 대의원회'(이하 총대의원회)를 1955년 조직하였다. 총대의원회는 각 단과대학에서 500명당 1명씩 선임하는 대의원 38명으로 구성하였다. 총대의원회는 의장 1명, 부의장 2명을 두고 임기는 6개월이었다. 총대의원회는 총운영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으나, 당시 학생 자치 활동이 대부분 단과대학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곧 폐지되었다가 1959년 부활하였다.

학도호국단의 활동은 초기에 규율부가 가장 활발하였다. 문예부에서는 학보 발간 및 웅변 대회 개최를 주도하였다. UN학생부에서는 영어 웅변대회를 개최하는 등 국제 교류 활동을 맡았다. 서울대학교 학도호국단은 학교를 대표하여 대외 행사도 주관하였다. 학내 활동으로는 종합 예술제, 장기 대회, 교내 웅변대회, 종합체육대회 등을 개최하였다. 당시 학생 활동은 서울대학교 학도호국단보다는 각 단과대학 학도호국단이 더욱 활발히 전개하였다. 각 단과대학의 학도호국단은 매년 신입생 환영회, 졸업생 환송회, 체육 대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단과대학별 학내 신문과 학보를 발간하였다. 각 단과대학 학도호국단의 운영위원장 선거도 중요한 학내 행사 중의 하나였다. 단과대학 운영위원장 선거는 농과대학, 문리과대학, 미술대학, 상과대학, 약학대학, 의과대학, 치과대학에서 5월에 실시하였고, 공과대학, 법과대학, 사범대학, 수의과대학에서는 10월에 실시하였다. 선거 때마다 열기는 대단하였다. 선거 열기는 학생들의 민주적인 의사 표



현이란 점에서 바람직한 면도 있었으나, 선거전이 과열되면서 금전 수수와 폭력 행사 등의 부정적인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1950년대에 학도호국단 해체론이 확산한 배경에는 이러한 선거 부작용도 큰 부분을 차지했다.

1951년 이후 학도호국단의 성격이 준군사적 학생 통제·동원 기구에서 학생 자치 기구로 변모하였지만, 위에서 조직한 학도호국단 체제는 여전히 학생들을 정치적으로 동원하면서 학생들의 자치 활동을 제약했다. 학도호국단 하부는 학생 자치 기구로 조직하였지만 상부는 행정 권력을 직접 행사할 수 있는 문교부 장관이 중앙의 단장을 맡았다. 비록 학도호국단 운영에서 학교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했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학도호국단은 정부의 하부 조직이기 때문에 정부의 요구에 따라 학생들을 정치적으로 동원하는 일은 1950년대 내내 있었다. 학생들은 관료적인 학도호국단 체제 때문에 원하지 않는 행사에도 동원되어야 했다. 1950년대에 학도호국단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동원된 행사는 다음과 같다.

1. 학생 출정 계몽 선전 운동 및 전시 학도 쫓기 대회(1953년 2월)
2. 북진 통일 학도 총쫓기 대회(부산: 1953년 4월 22일)
3. 휴전 회담 반대 데모(1953년 6월 12일)
4. 미군 철수 반대 국민 총쫓기 대회(1954년 9월 26일)
5. 英·加 타협안 반대 국민 총쫓기 대회(1954년 11월 8일)
6. 대한민국 주권 옹호 학도 총쫓기 대회(1954년 11월 18일)
7. 적성 휴전 감위 축출 국민 대회(1955년 8월 6일, 학생 동원 4개월)
8. 이박사 대통령 재출마 요청 데모(1956년 3월 10일)
9. 대한 학도 반공 쫓기 대회(1956년 10월 20일)
10. 신의주 학생 의거 사건 기념 대회(1956년 11월 23일)
11. 감군 반대 데모(1957년 9월 24일)
12. 인도네시아 반공혁명군 지원 쫓기 대회(1958년 5월 24일)
13. 재일교포 복송 반대 데모(1959년 2월 13일, 학생 동원 6개월)
14. 아시아 반공 민족 대표 환영 및 반공 총쫓기 대회 학도 참가 시가행진(1959년 6월)

특히 위의 7과 13의 경우 무려 4~6개월 간 학생을 동원하여 정상 수업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 일상적인 동원에 시달리던 학생들은 학생 자치 기구라기보다 실질적인 학생 동원 기구이던 학도호국단에 불만이 컸다. 학도호국단은 점차 이승만 정권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위대로 전락했다. 게다가 일부 학도호국단 간부 학생은

정치적 출세를 위해 정권에 충성하였다. 1960년 3·15 부정 선거 직전 일부 학도호국단 간부는 구국학생총연맹이라는 어용 단체를 구성하여 이승만과 이기붕의 지지 운동을 하였다. 이에 일상적인 학생 동원과 학도호국단의 횡포에 시달리던 학생들은 1950년대 내내 학도호국단의 해체를 요구하였다.

### 3) 학도호국단 해체론의 확산

학도호국단에 대한 학생들의 반발과 해체 요구는 이미 1950년대 전반기부터 있었다. 학생들의 학도호국단 비판은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학도호국단 간부들의 감투 싸움과 과도한 학생 규제 및 동원에 대한 비판이었고, 다른 하나는 학도호국단 간부들이 제기한 내부 비판과 학도호국단 해체 논의였다. 전자와 관련하여 학생들은 학도호국단 간부들이 마치 규율 부장처럼 군림하면서 월권 행위를 일삼는다고 꼬집었다. 반(半)학생, 반(半)정치인인 학도호국단 간부가 학생들을 원치 않는 정치 시위에 동원하면서, 기성 정치인 비슷하게 권모술수를 부리거나 예산 낭비만 일삼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후자와 관련하여 1953년 10월에 열린 학도호국단 중앙학생위원회에서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과 고려대학교의 공동 제안으로 “학도호국단은 업적이 미미하고 관료적이므로 해산해야 한다.”는 학도호국단 해체론이 대두되어 격론 끝에 표결한 결과 32 대 7로 부결되었다. 학도호국단 해체론이 부결되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제의로 학도호국단의 재정권 및 집행권 이양을 중앙지도위원회에 요구하였으나 이 역시 거부당했다. 비록 관철하지는 못했지만 이와 같이 서울대생들 사이에서는 학도호국단 해체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학도호국단 해체론이 대두할 당시 『대학신문』에서 학도호국단에 대한 좌담을 마련했다. 여기서 문리과대학의 한 학생은 “학도호국단의 공적이 있다면 행정부가 기획하고 있는 행사에 학생들을 일률적으로 순응 복종케 하던 것뿐”이라고 질타하면서, 학도호국단은 학생의 운동체가 아니라 관료의 운동체에 불과하며 “학생들은 그들의 결정 지시에 수동적으로 응할 의무가 있을 뿐”이라며 학도호국단 해체를 주장하였다.

1954년과 1955년에 서울대를 중심으로 한 일부 학도호국단 간부가 학도호국단의 제반 시책이나 운영 방책, 예산 편성이나 집행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각종 정치 행사에 학생들을 동원하는 폐단을 시정하려 하였다. 그러나 현실에서 학생 동원의 폐단은 전혀 시정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학도호국단 해체론이 계속 대두되었지만 언제나 압도

적인 표차로 부결되었다. 1956년 3대 정·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학도호국단을 통한 학생들의 정치 도구화 문제가 다시금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이때는 학도호국단 해체론과 더불어 더 현실적인 '개편론'도 제기하였다. 당시 학도호국단 해체론의 근거는 첫째, 호국단은 이제는 그 사명을 다했다, 둘째, 학도호국단은 학생 자치 활동의 암적 존재다, 셋째, 교내 학생 활동은 점차로 학도호국단과 관계가 없어지고 있다 등이었다. 1956년 당시 서울대학교 학도호국단 운영위원장이 주장하던 개편론은, 중앙 집권적이며 행정 체계적인 체제를 오직 학생만으로 조직하는 체제로 개편하여 학도호국단이 각 학교 단위로 학생 자치 활동에 치중하자는 내용이었다.

1957년 서울대 학생들은 학도호국단의 폐지 문제를 학문의 자유와 독립과 직결한 문제로 파악하고 학도호국단 폐지를 위해 더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우선 학도호국단 해체를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폐지를 주장하는 학생들의 여론을 조직하였다. 다음으로 추진위원회는 충훈탑 제막식을 계기로 각 학교 운영위원장 60여 명과 회의를 갖고, 학도호국단 해체의 전 단계로서 학도호국단 중앙학생위원회와 중앙학생상임위원회를 부활시키고 침체한 학생 자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 합의안은 학도호국단 중앙지도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 이 결과 이후 학생들 내부에서 간간히 학도호국단 해체론이 제기되었지만 진전된 행동으로 발전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1950년대 중반 이후 학도호국단 운영위원장 선거 때면 학도호국단 해체라는 공약이 자주 등장하였고, 1959년 말부터 일부 학도호국단 간부는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를 호소하면서 1960년 2월 공명선거추진학생위원회를 결성하기도 했다. 이렇듯 1950년대 내내 해체론에 시달리던 학도호국단은 결국 1960년 4·19 혁명으로 해체되었다. 그리고 명실상부한 학생 자치 기구로 '학생회'가 건설되었다. 학생 자치를 위한 1950년대 서울대생들의 지속적인 모색과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은 것이다.

## 제2절 학생회 건설과 단과대학 학생회의 활성화(1960~1975년)

### 1) 학도호국단 해체와 학생회 건설

4·19 혁명 이후 사회 전반에 쇄신 움직임이 일어나자 대학에서는 어용적인 학도호

국단을 해체하고 실질적인 학생 자치 기구로서 학생회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소리가 높아졌다. 1960년 4월 30일 열린 공과대학과 상과대학의 학생 총회에서 학도호국단 해체를 결의하였으며, 같은 날 열린 문리과대학과 법과대학의 교수회도 학도호국단의 해체를 요구하였다. 이와 같은 대학의 여론을 따라 당시 과도 정부(수반: 허정)는 5월 3일 국무회의 결의를 거쳐 학도호국단을 해체하였다. 학도호국단을 해체한 후 학생들은 어용·무능 교수를 배척하는 학원 숙정 운동을 펴면서 자치적으로 학생회를 조직하기 시작했다. 먼저 각 단과대학별로 학생회장을 선출하고 학생회칙을 제정하였다. 문리과대학을 제외한 단과대학의 학생회장은 직선으로 선출하고, 문리과대학은 각 과에서 학생 30명당 1명의 비율로 대의원을 뽑아 대의원회에서 학생회장을 선출하였다.

이러한 단과대학별 학생회 구성과 동시에, 5월 5일에 열린 학장회의에서 총학생회 구성을 골자로 하는 「학생 자치 기구 조직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여 총장 명의로 각 단과대학에 시달하였다. 5월 23일 12개 단과대학 학생회장들은 전문 3장 27조의 '서울대학교 학생회 헌장'을 성안하여 제1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를 출범시켰다. 6월 3일에는 각 단과대학 여학생 대표들이 모여 '여학생회'를 따로 구성하였다. '서울대학교 학생회 헌장'의 규정에 따라 총학생회는 12개 단과대학 학생회장과 여학생 대표 1명으로 구성하였다. 총학생회에는 정·부회장을 각 1명씩 두고 단과대학 학생회장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윤번제(輪番制)로 돌아가면서 맡았다. 총학생회 의장은 일반적으로 총학생회장으로 불렸다. 총학생회는 매월 1회 정기 모임을 하고 여기에서 예산, 결산, 예비비 지출 및 대외 대표 파견 등 중요 안건을 의결했다. 당시 건설한 총학생회는 1960년 2학기 등록금 중 후원 회비를 국가가 부담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여 관철했고, '서울대학교 국민계몽대'를 구성하여 농촌 계몽 활동을 추진하고 '새생활 운동'도 벌였다.

1961년 5·16 쿠데타 이후 군사 정권은 각 학교에서 건설한 학생회들을 '재건학생회'라는 이름으로 개편하려 했지만 학도호국단의 재판이라는 비판에 직면하여 계획을 포기했다. 대신 서울대는 총학생회에 의결 기관이 없던 제도상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1961년 11월 각 단과대학 대의원회 의장들로 구성하는 '서울대학교 대의원회'를 만들었다. 그러나 대의원회 활동은 그리 활발하지 못했다. 단과대학 학생회장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총학생회장을 맡는 제도도 총학생회의 합리적인 운영을 저해했다. 총학생회장 윤번제는 당시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캠퍼스 사정과 서울대학교의 연립 대학적 성격을 반영한 제도였지만, 이로 인해 총학생회의 일관되고 책임 있는 운영과 총학생회 내부의 의견 일치가 쉽지 않았다. 그리하여 1962년 7월 학생회 회칙을 개

정하여 총학생회장의 임기를 6개월로 변경하고 단과대학 학생회장 회의와는 별도로 '집행위원회'를 설치했다. 1963년 3월에는 단과대학 학생회장들이 구성하는 기존의 총학생회를 의결권을 가진 '본부회의'와 집행권을 가진 '운영위원회'로 나누어 이원화하였다. 총학생회가 이원화하면서 명목상 총학생회장제는 사라졌지만, 본부회의 의장이 총학생회를 대표하게 되어 일반적으로 본부회의 의장을 총학생회장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이러한 이원적 운영 체제 역시 의견 일치가 어려워 총학생회의 원활한 운영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 오히려 당시 총학생회는 1963년 11월 창경원(현 창경궁)에서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하는 '5천 쌍 카니발'을 주도하여 학교 안팎의 큰 비판을 받았다.

총학생회 주관 행사의 목적은 주로 단과대학 간 유대를 강화하고 서울대생 전체의 친목을 도모하는 데 있었다. 중요한 행사로는 '종합 대학제', '종합체육대회', '총장기 쟁탈 종합 마라톤 대회' 등이 있었고, 그 밖에 각종 봉사 활동, 파월 장병 위문 등의 행사를 전개하였다. 총학생회는 1965년 학원 풍토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각 단과대학의 축제를 통합하여 새로이 제1회 '종합 대학제'를 마련하였다. 이 행사에서는 학술 강연회, 대음악회, 좌담회 등이 열렸는데, 학술 강연회는 정치, 경제, 법률, 철학, 과학 등 다양한 주제로 교수들이 강연하였다. 좌담회의 주제는 '학원의 어제와 오늘'이었다. 제1회 종합 대학제를 계기로 총학생회의 활동은 사회 활동과 문화 활동 이외에 학술 활동으로 확대하였다. 1966년 제2회 종합 대학제는 진리를 지향한 내면적 학구열을 고취한다는 취지 아래 음악 경연 대회, 장기 대회, 포크 댄스 파티, 가든파티 등의 행사를 마련하였다. 그 후 총학생회가 주최하는 축제는 대학가의 혼란과 총학생회 활동의 부진으로 오랫동안 열리지 못했다. 1970년과 1973년에 '대학 축전'이라는 행사가 잠시 열렸을 뿐이다. 1973년 '대학 축전'에서는 마라톤 대회, 등반 대회와 함께 '독도와 한·일 관계'를 주제로 강연회가 열렸다.

종합체육대회는 1963년까지 총학생회와 학생처의 공동 주최로 개최했는데, 1964년 이후로 학생2과에서 주관하였다. 종합체육대회는 단과대학의 학생 규모에 따라 공과대학, 농과대학, 문리과대학, 사범대학, 상과대학, 교양학부의 A조와 의과대학, 약학대학, 치과대학, 음악대학, 미술대학, 법과대학, 가정대학의 B조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이 대회는 1971년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열었으나 그 뒤 1974년까지 중단했다가 이후 재개하여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다. 총학생회가 주관하는 '총장기 쟁탈 종합 마라톤 대회'는 1967년 6월 제1회 대회를 연 이래 꾸준히 계속되었다. 희망자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었으며 매년 2백~3백 명의 학생이 참가하였다. 마라톤 대회 참가 학생들은 동승동 문리과대학 앞-종로 5가-신설동-고려대학교 앞-미아리 3거리-돈암동-혜화동-문리과대학 정문으로 이어지는 14km 코스를 달렸다.

총학생회 경비는 학생 수혜 경비 중 일부로 충당하였다. 1971년도 총학생회 경비를 보면, 단과대학의 수혜 경비에서 1인당 20원씩 계산하여 총학생회의 경비로 각출하였는데, 그 총액은 한 학기당 1만 원 안팎에 불과하였다. 그나마 회의비와 연례적인 위문 행사비를 제외하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총학생회를 제대로 운영할 수 없었다. 따라서 총학생회가 강력한 집행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총학생회장을 직접 선거로 선출하고 총학생회 예산을 대폭 늘어나야 한다는 여론이 일기도 했다. 캠퍼스가 분산해 있고 연립 대학적이며 예산이 빈약한 점은 종합화 이전 총학생회가 갖고 있던 근본적인 한계였다. 여기에 학생 운동과 관련한 정치적인 탄압까지 더해져 총학생회는 조직과 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 2) 학생회 조직과 활동의 어려움

서울대학교 학생회의 역사는 학생 운동의 역사와 밀접한 연관이 있고, 학생 운동의 역사는 한국 정치의 역사와 깊은 관련이 있다. 이는 학생회가 정치적인 격변 속에서 자유롭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학생 운동과 관련한 외부 압력과 정치적 탄압은 학생회 조직과 활동에 직접 영향을 끼쳤다.

우선 1964년과 1965년 한일 회담 반대 운동 과정에서 학교 당국이 학생회 간부들을 처벌하고 학생회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아 총학생회의 활동이 실질적으로 중단되었다. 그 이후로도 1967년 '6·8 부정 선거' 규탄 운동과 '삼성 밀수' 규탄 운동의 여파로 총학생회는 오랫동안 구성조차 순조롭지 못하였다. 1968년에 와서야 회칙을 개정하면서 체질 개선과 방향 전환을 꾀하였다. 1968년 4월에 개정된 회칙은, 이전까지 의결 기관인 본부회의와 집행 기관인 운영위원회의 이원적 운영 체제로 말미암아 총학생회가 강력한 활동을 추진하지 못하던 점을 시정하기 위해 본부회의 의장인 총학생회장에게 권한을 집중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즉 종전의 운영위원회를 없애고 사업을 계획하여 상정하는 기획위원회와 예산 집행을 관장하는 총무위원회를 두어 사무를 분담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했다. 또한 총학생회장은 이전까지 운영위원회 산

하에 있던 각 부서를 직접 관할하면서 각 위원회의 의결 사항에 대해 독자적인 인준권과 거부권을 가졌다.

시위와 처벌이 잦아 1968년 2학기가 될 때까지 총학생회를 조직하지 못해 1학기에 선출한 회장이 유임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1968년 9월 총학생회 역사상 첫 번째로 총학생회장이 2학기에 선출되어 6개월의 임기를 마쳤다. 1969년 '3선 개헌 반대 운동'의 소용돌이 속에서 각 단과대학 학생회는 처벌 학생 구제 운동을 벌였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그 결과 1970년 문리과대학에서는 처벌 학생을 구제하는 데 실패한 책임을 물어 대의원회가 학생회장 불신임안을 내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1971년 정부가 대학의 교련 교육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하자 총학생회는 교련 철폐 운동에 앞장섰다. 이렇게 학생회가 중심이 되어 교련 철폐 운동을 계속하자 정부는 학생회와 학생 활동에 관한 대폭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했다. 서울대학교 개교기념일이던 1971년 10월 15일 정부는 서울 지역에 '위수령'을 발동했다. 10월 18일 문교부는 학원 소요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학생 활동을 대폭 규제하는 학칙 개정안을 전국 각 대학에 시달하였다. 그중 학생회에 관한 규제를 살펴보면, 학생회와 대의원회의 회칙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임원으로 선출된 자는 총·학장의 인준을 받아야 했다. 총장은 학생회 및 그 산하 단체의 활동이 목적에 어긋났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해체하거나 임원 개선을 명할 수 있었다. 그 해 12월 학교 당국은 이 학칙 개정안에 따라 각 단과대학 학생회의 집행부와 대의원회 조직, 학생 총회와 임원 선거 절차, 각 기구의 집회 및 의결 정족수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새로운 원칙을 제시하였다. 단과대학별 특성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조직, 운영하던 단과대학 학생회들은 큰 변화를 맞이했다. 기존 학생회는 이 원칙에 의거한 새로운 학생회를 구성할 때까지 활동을 정지했고 이에 따라 모든 학생 활동이 극도로 침체했다. 이때부터 학생들 사이에 패배주의적 경향이 나타났고 '마이티'와 같은 현실 도피적 카드 놀이가 등장했다.

1972년이 되자 학교 당국은 학생들에게 1학기 중으로 각 단과대학 학생회를 구성하도록 종용했다. 그러나 새로운 원칙에 따른 학생회 구성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다. 학생들 사이에 개정 학칙과 새로운 원칙에 대한 반발심과 무관심의 기운이 팽배하였다. 대의원회 정족수 미달로 선거관리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한 단과대학도 있었고, 어렵게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 단과대학도 학생들의 입후보 기피 현상으로 회장 선출이 어려웠다. 많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단과대학 대부분은 학생회장 선거를 마쳤으나 문리과대학과 법과대학의 경우는 끝내 학생회를 조직하지 못한 채 그 해를 넘기고 말았다.

당시 총학생회는 1972년 3월 제정한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회칙 준칙’(이하 학생회 준칙)에 따라 새롭게 구성했다. 집행부로는 정 부회장 각 1명 아래에 총무부, 학예부, 기획부, 체육부, 여학생부를 두었다. 정·부회장은 운영회의에서 선출하였으며 임기는 한 학기였다. 단과대학 학생회장들로 구성된 운영회의는 사업 계획 및 예산·결산의 승인, 회계 및 사무 감사 등의 권한이 있었다. 그러나 각 단과대학 학생회를 순조롭게 조직하지 못하자 단과대학 학생회장으로 구성하는 총학생회 역시 제대로 조직하지 못했다. 학생회 조직이 어려움을 겪자 학생 활동도 부진해졌다. 학생회를 조직하지 못한 단과대학은 체육 대회 등의 학생 행사를 학생과가 주최하는 편법을 쓰기도 했다. 그때까지 학생회와 별도로 독립적인 활동을 벌여 오던 각 서클과 단체도 학생회를 구성해야만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개정 학칙의 조항 때문에 활동이 자유롭지 못했다.

학생회에 대한 제약이 여전한 가운데서도 1973년부터 학생들은 학생회 조직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른바 ‘10월 유신’ 이후 더욱 암담해진 정치 상황에서 학생회를 통해 최소한의 학생 활동이나마 벌일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4월 26일 법과대학 선거를 마지막으로 모든 단과대학에서 학생회장을 선출하고 학생회를 조직했다. 총학생회도 5월에 다시 조직했다. 비교적 순조롭게 조직한 1973년 학생회 역시 정상적으로 운영하지는 못했다. 10월 유신 이후 1973년부터 시작된 유신 반대 시위와 학생 처벌의 악순환 속에서 10월 4일 법과대학 학생회가 자진 해산하였고, 문리과대학, 의과대학, 상과대학, 사범대학도 학생회를 해체하거나 학생회 간부들이 구속되었다. 총학생회와 단과대학 학생회 대부분은 다시 기능이 마비되었다.

1974년에는 ‘긴급 조치’와 학생 자치 활동 억제 정책 속에서도 학생회 활성화와 학원 민주화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다. 당시 총학생회 조직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이 전교 차원의 의결 기구인 총대의원회가 없다는 점이었다. 1973년 6월부터 시작한 총학생회 회칙 개정 작업을 이어받아 1974년 9월에 총학생회 회의에서 총대의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당시 총학생회가 추진하던 ‘구속 학생 석방을 위한 서명 운동’이 좌절된 후 총대의원회 구성 노력도 수포로 돌아갔다. 1975년 1월 관악 캠퍼스 이전을 앞두고 총학생회는 학생 자치 활동의 침체를 탈피하기 위한 7개항의 요구를 총장에게 건의했다. 학생회의 민주적 운영에 관한 건의와 더불어 분출하던 학내 전반의 민주화 요구는 1975년 3월 24일 관악 캠퍼스에서 연 비상 학생 총회와, 3월 26일 공과대학 비상 학생 총회, 28일 농과대학 비상 학생 총회에서 절정에 이르렀다. 학생들이 학원 민주화 요구를 하였지만 1975년 5월 13일 ‘긴급 조치 9호’ 선포 후 학생회는 전면 해체되었다.



그리고 4·19 혁명으로 해체한 학도호국단이 학생회를 대신하여 다시 부활한다.

### 3) 단과대학 학생회와 여학생회의 활동

종합화 이전 캠퍼스가 분산하고 연립 대학적 성격이 강했던 시기에는 총학생회보다 단과대학 학생회의 활동이 더욱 활발하였다. 학생 자치 활동도 주로 단과대학 학생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각 단과대학 학생회는 총학생회와는 별개의 독자 체계로 운영했다. 단과대학 학생회는 필요에 따라 집행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 대의원회를 두었으며 공과대학과 같이 '자매부락 사업위원회'를 두는 경우도 있었다. 집행부의 조직도 단과대학의 특성에 따라 구성했으므로 서로 차이가 있었다. 단과대학 학생회 집행부는 대개 학생회장, 부회장, 총무부, 학예부, 체육부, 섭외부 등을 두었다. 여학생들의 수가 적은 단과대학은 '여학생부'를 따로 두었다. 단과대학별로 공과대학의 '공작부', 미술대학의 'CR부', 의과대학 치과대학의 '진료부'와 같이 다른 단과대학에는 없는 부서를 설치하였다. '총여학생회'와 '교양과정부 학생회'도 단과대학 학생회와 비슷한 체제였다.

단과대학 학생회의 학내 활동 중 큰 행사는 축제, 신입생 환영회, 체육 대회, 학생회장 선거, 학보 발행 등과 수시로 개최하는 강연회, 음악 감상회 등이었다. 신입생 환영회는 대개 음악과 재담, 각종 흥겨운 오락 행사로 엮었는데, 재학생과 신입생의 유대를 돈독히 하는 한편 신입생에게 단과대학을 소개하는 기회로 삼았다. 체육 대회는 대부분 단과대학에서 1년에 1번씩 개최하였다. 체육 대회에서는 각 학과들 사이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학과 대항 구기 및 육상 경기를 열었다. 축제는 단과대학 학생회의 가장 큰 행사였다. 축제는 각 단과대학 학생회의 주관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열었고 학생은 물론 가족 및 교직원이 참가한 가운데 각종 행사를 진행하였다.

단과대학 학생회가 활성화하면서 학생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 열기 또한 뜨거웠다. 하지만 종종 그 열기가 도를 넘어 부작용이 생기기도 했다. 매 학년도 초 혹은 2학기 말에는 단과대학마다 학생회장을 선출하는 선거를 실시했다. 1960년대에는 학생 자치 활동의 경험이 별로 없어서 학생회장 선거 때마다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선거에 얽힌 잡음은 소수의 단과대학 학생회장들이 참여한 총학생회장 선거에서도 들려왔지만, 학생들의 직선으로 실시하는 단과대학 학생회장 선거의 경우가 더 심했다. 당시 『대학신문』의 표현을 빌리면 “선거를 위한 학생회인지 학생회를 위한 선거인지를 종잡을 수 없을 만

큼 출신 고교별로, 지방별로 파벌을 형성하고 심지어는 수십만 원을 선거자금으로 낭비하"는 일이 있었다. 기성 정치인의 선거 풍습을 모방한 과도한 방법도 동원하였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선거 과열과 잡음을 막기 위해 노력하였다. '6·8 부정 선거' 규탄 운동이 한창 진행 중이던 1967년 문리과대학 학생회장 선거에서는 문리과대학 선거 사상 처음으로 선거관리위원회와 입후보자가 함께한 자리에서 입후보자가 깨끗한 선거를 약속하는 선서식을 가졌다. 1969년에는 상과대학도 선거 공동 관리제를 채택하였다. 선거 질서를 확립하려는 학생들의 노력으로 1970년대부터는 학생회장 선거에서 과열과 잡음이 많이 사라졌다.

한편 서울대학교 여학생들은 학생 구성에서 남학생들에 비해 수가 매우 적고, 학생 활동이 대부분 남학생 중심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여학생들은 기존 학생회와 별도로 '여학생회'를 조직하여 활동하였다. 여학생회 역시 4·19 혁명 이후 학생회의 부활과 함께 탄생하였다. 먼저 각 단과대학별로 여학생회를 조직하고 각 단과대학의 여학생 대표들이 모여 '총여학생회'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총여학생회의 대표는 단과대학 학생회장들과 더불어 총학생회에 참여하였다. 이후 여학생회는 1972년 개정된 '학생회 준칙'에 따라 재편하면서 총여학생회라는 명칭을 '총여학생부'로 바꾸고 위상도 조금 낮췄지만 조직 체계는 큰 변화 없이 계속 유지했다. 4·19 혁명 이후 여학생회를 조직하기는 하였지만 활동은 그리 활발하지 못했다. 1960년대 학생회장 선거를 치열한 선거전 속에서 치를 때도, 여학생회 임원은 선거라는 명칭이 무색할 정도로 관심을 못 받으며 선출할 때가 많았다.

당시 총여학생회의 활동 중 중요한 것으로는 여학생회관의 운영, 신입 여학생 환영 페스티벌, 하기 봉사 활동, ROTC 방문, 양로원 방문, 축제 '여울제' 개최, 그리고 회지 『여울』 간행 등이 있었다. 여학생회관은 1966년 4월에 개관하였으며 동송동 문리과대학 캠퍼스 옆에 있었다. 백 평 정도의 면적에 마치 가정집같이 꾸민 이 회관에서 여학생들은 단체 활동을 벌이고 개인적으로 비품을 사용하거나 휴식을 취하였다. 매년 개관일에는 총장을 비롯하여 학·처장과 남학생들을 초청하여 오픈 하우스 행사를 했다. 학생회와 마찬가지로 총여학생회도 매년 여름 방학에 농촌 봉사 활동을 하였다. 경기도 용문군 다문2리, 광주군 광지원리, 전북 임실군 지장리 등으로 떠났는데 봉사 활동 이후에는 「결과 보고서」와 「농촌 실태 조사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총여학생회는 여학생 축제인 여울제를 개최하였고 여울제는 1974년까지 3번 열었다. 여기서는 페스티벌, 단과대학별 장기 대회, 행운권 추첨, 학술 토론회 등을 열었는데, 학술 토론회의 주제는 '민

족 주체성의 입장에서 본 여성의 자세', '현대 사회와 인간 소외' 등이었다. 여학생회의 회지인 『여울』은 교수 및 여학생의 연구 논문, 시, 수필 등을 실었고 1968년부터 1974년까지 여섯 차례 간행했다.

여학생회의 활동도 총여학생회보다 각 단과대학 여학생회에서 더 다양하게 벌였다. 전교생이 여학생인 가정대학의 경우에는 미용 강좌, 교내 환경 미화 등의 활동이 유명했고, 미술대학은 꽃씨 뿌리기, 가면 제작, 파라핀 염색 강습, 라자로마을 방문 등의 활동을 했다. 당시 총여학생회와 단과대학 여학생회의 활동은 대부분 '여성적인 것'을 주 내용으로 하였다. 이는 이후 1980년대 여학생들이 의식적으로 남학생들과 동일한 활동을 한 것과 큰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총학생회, 단과대학 학생회, 여학생회에서 벌인 각종 학생 활동은 1975년 학생회가 해체되고 학도호국단이 부활하면서 크게 위축된다.

### 제 3 절 학도호국단 부활과 학생들의 반발(1975~1984년)

#### 1) 학도호국단 부활과 학생 활동의 위축

1975년 3월 관악 캠퍼스 이전을 앞두고 총학생회는 학생 활동의 새로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의 일환으로 1975년 1월 28일 학생회는 학원 분위기의 진작과 학생 자치 및 과외 활동의 활성화를 요청하는 건의문을 학교 당국에 제출하였다. 동시에 총학생회 회칙의 개정 방안도 마련하여 학교 당국에 건의했다. 학생들은 학칙의 민주적 개정과 함께 학생 활동에 대한 규제 완화, 상설편집장회의와 총대의원회 설치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학교 당국이 마련한 개정 학칙 시안은 학생들의 요구를 거의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반발한 학생들은 1975년 3월 24일 관악 캠퍼스에서 비상 학생 총회를 열고 학칙의 민주적인 개정과 유신 반대 운동에 참여했다가 투옥 후 석방된 학생들의 조속한 복학을 촉구하였다. 비상 학생 총회는 3월 26일 공과대학 캠퍼스, 28일 농과대학 캠퍼스로 이어졌다. 4월 이후 학생들의 학원 민주화 요구는 더욱 가열되었고 연일 시위를 계속했다. 계속된 시위로 인해 학교는 4월 8일부터 임시 휴교에 들어갔다.

1975년은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급박한 시기였다. 유신 헌법을 철폐하라는 학생과 시민의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베트남이 사회주의 국가로 통일되자 박정희 정권은 안보 의

식 강화로 유신체제를 더 공고히 하고자 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연일 안보 쫓기 대회가 열렸다. 안보 쫓기 대회에 나선 연사들은 베트남 다음으로 안보를 위협받을 곳은 한국이며 따라서 국론 통일이 시급하다고 선전하였다. 서울대학교도 5월 9일, 교수와 학생 약 7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안보 쫓기 대회를 열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정부는 5월 13일 그 동안 발동된 긴급 조치들을 모두 포괄하는 긴급 조치 9호를 발동하였다. 유신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강경책이었다. 긴급 조치 9호는 “국민들의 안보 의식을 높이고 총력 안보 태세와 국민 총화를 굳건히 한다.”는 목적을 내걸고, “헌법 개정 철폐 주장”, “유언비어의 유포”, “학생들의 불법 집회”, “시위와 정치 관여 행위” 등을 엄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는 국민들의 자유와 기본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행위였다. 긴급 조치 9호 발동 이후 사회 전반의 분위기는 극도로 침체하였다.

긴급 조치 9호를 발동한 직후인 5월 15일 학교는 다시 문을 열었다. 개강 직전 학장회의의 이름으로 학생들의 자중자애(自重自愛)와 면학 분위기 진작을 호소하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학생 활동을 점점 더 강하게 규제하는 가운데 정부는 5월 20일 전국의 98개 대학 총장회의를 소집하여 모든 대학과 고등학교에 학도호국단을 설치할 것과 대학에서 군사 교육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날 오후 국무회의는 ‘학도호국단설치령’을 의결하였고, 6월 28일 문교부는 ‘학도호국단설치령 시행 세칙’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각 학교에 학도호국단을 조직하기 시작했다. 서울대학교도 6월 30일 학도호국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9월 26일에는 여의도 광장에서 중앙학도호국단 발대식을 열었다. 정부 수립 직후에 창설한 학도호국단이 1960년 4·19 혁명으로 해산했다가 15년 만에 다시 부활한 것이다.

부활한 학도호국단은 총장을 단장으로, 학생처장과 학생군사교육단장을 부단장으로 하여 중앙에 지도위원회를 두고 그 밑에 학생제대(學生梯隊) 및 운영위원회를 두었다. 학생 제대는 일종의 군사 조직으로 사단, 연대, 대대, 중대, 소대, 분대 단위로 편성하였고, 대대 이상의 경우 산하에 총무부, 훈련부, 문예부, 새마을부, 체육부, 지도부, 여학생부 등을 두었다.

학도호국단의 성격은 이전 학생회와 전혀 달랐다. 아래에서 살펴볼 학도호국단 운영 규정에서 확실히 알 수 있듯이 학도호국단과 학생회는 존재 목적이 달랐다. 학생회가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자치 활동을 해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학도호국단은 국가 안보 의식을 학생들에게 주입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였다. 한마디로 학도호국단은 준(準)전시 조직이었다. 학도호국단 운영 규정의 제2조(운영 방침)에 나오

는 “단장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한 지도체제를 확립한다.”, “학도호국단의 기본 정신에 배치되는 단체의 파생을 억제한다.”, “학생 군사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태세를 확립한다.” 등의 조항과, 제3조(임무)에 나오는 “국가 안보에 관한 정신 교육 실시”, “학생 군사 훈련의 실시”, “작전 지역에서의 군사 지원 협조 또는 지역 방위 분담” 등의 조항은 학도호국단의 존재 이유를 잘 보여 준다. “일사불란한 지도 체제”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학도호국단은 유신체제를 대학에서까지 실현하기 위한 기구였다. 이에 따라 학도호국단은 상명하복(上命下服)을 강조했고, 학도호국단 간부 인선도 상부가 일방적으로 임명했다. 학도호국단 설치령 제10조는 “중대장 이상의 제대장(부제대장을 포함)은 일정한 임명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학생처(과)장인 부단장의 추천으로 단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었다. 간부의 기준 역시 “5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품행이 방정하고 사상이 건전한 학생 중 지도 통솔력이 있으며 이수한 성적의 평점이 B-(2.7) 이상인 자”로 한정하였다.

학도호국단 부활 이후 학생들의 자유로운 자치 활동은 크게 위축되었다. 우선 모든 학생 활동은 학도호국단의 틀 안에서만 이루어졌다. 당시 학칙 제76조의 “학도호국단에 소속되지 아니한 학생 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는 학도호국단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학도호국단 바깥의 학생 활동은 거의 불가능했다. 실제 서클 활동의 경우 등록 과정에서부터 제약이 많았다. 서클을 조직하려면 매 학년도 개시 25일 전까지 단체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지도 위원 취임 승락서, 회칙, 임원과 회원 명단, 사업 계획 및 예산서, 활동 실적 보고서, 종합 단체 결성 동의서 등을 첨부하여 각 단과대학을 거쳐 운영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했다. 서클 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운영위원장이 분과지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뒤 단장에게 승인 신청하고, 단장이 지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뒤 승인해야만 서클을 구성할 수 있었다. 또 회원이 15명 이상이고 지도 교수가 1명이 있어야 하며 반드시 “건전한 서클”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두어 자유로운 서클 조직과 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였다. 특히 ‘이념 서클’을 만들 경우 지도 교수를 두기란 거의 불가능했다. 서클 지도 교수는 학생들의 ‘감시자’ 역할을 해야 했고 만약 문제가 생기면 문책을 당해야 했기 때문에 이를 맡으려는 교수는 거의 없었다.

이 때문에 복잡한 등록 절차를 마쳐도 뚜렷한 이유 없이 승인을 받지 못하는 서클이 많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 서클로서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활동을 하는데 제약이 많았다. 행사를 하고자 할 경우 일시와 장소를 명시하고 지도 교수의 동의서

를 첨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단장이나 분과지도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했으며 여기에는 반드시 지도 교수가 참석하여야 했다. 특히 농악, 탈춤 등의 민속 행사나 연극 공연과 같이 비판적인 성향이 농후한 활동은, 비좁은 장소에 학생이 너무 많이 몰린다는 이유 등으로 승인을 거부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자연히 학생 활동은 위축할 수밖에 없었다.

부활한 학도호국단은 학생들에게서 1인당 5천 원씩 단비를 강제로 거두어 활동 경비로 사용하였다. 5천 원 중 2천 원은 체육 진흥비로 책정하였고, 3천 원은 서클 지원비로 책정하였다. 그런데 1979년의 경우 서클 지원비 가운데 실제로 서클에 지원한 액수는 미미하였으며, 행사 지원비의 3배에 가까운 돈을 학도호국단 간부 수련 회비로 사용하였다. 또한 학도호국단이 주관한 축제와 같은 행사 가운데 심포지엄, 강연회 등 학생들에게 비판 의식과 문제의식을 길러줄 수 있는 행사는 거의 없었고, 오직 체육 행사만 활발하게 진행했다. 또한 탈춤이나 연극 공연과 같은 행사는 의도적으로 예산 지원을 적게 해 주거나 제재를 가하였다. 학도호국단의 일방적인 예산 운용은 학생들에게 획일적인 군대식 사고방식을 유도하였다. 이에 따라 학생들 사이에서는 “호국단 시절 동안 잃은 것은 비판 의식이요, 얻은 것은 현실과 타협하는 무사 안일주의다.”라는 자조적인 말이 나오기도 했다. 학도호국단에 대한 학생들의 비판과 반발은 점차 거세졌다.

학도호국단이 학생들의 외면을 받으면서 비공식 기구인 과회장회의가 학생들의 대변자 역할을 하였다. 1977년 4월 말에는 ‘학생회 부활’을 요구하는 시위도 일어났다. 학도호국단 간부진 내부에서도 학생들과 유리된 학도호국단 활동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고 간부 임명제를 선출제(간선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학도호국단에 대한 개혁 움직임은 1977년 2학기에 더 구체화했다. 그 해 10월 정부는 “학도호국단 간부의 임명제는 학원 질서 확립과 전시 대비 등을 고려한 것으로서 국가 안보상 위험이 없어질 때까지 불가피하다.”는 논리로 선출제 개혁을 일단 거부하였다. 대신 11월 30일 학교 당국을 통해 학도호국단 편제를 학과 단위 중심으로 하고, 교수와 학생이 함께 학도호국단에 참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선책을 제시하였다. 개편안의 내용은 “종래 교련 시간 중심으로 조직된 횡적인 학도호국단 편성을 각 학과 단위의 종적인 조직으로 바꾼다. 따라서 단과대학은 학과 연락 학생을 학과의 규모에 따라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으로 임명한다. 한편 학도호국단 요원의 추천 방법은 학과 요원의 경우 각 학과에서 당해 학과 학생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소·중·대대장 요원 및 학년별 요원을 각 2인 이상으로 하며, 학과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장에게 추천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다. 이 개선책은 학생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반영하였지만, 여전히 선출제 요구를 거부하고 임명제를 고수하였다. 결국 1979년 10월 26일 10·26 사태로 박정희 정권이 무너질 때까지 학도호국단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없었다.

## 2) 10·26 사태 이후 학생회 재건 시도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되자 유신체제는 막을 내렸다. 그 동안 긴급 조치의 억압 속에서 자치 활동의 권리를 박탈당했던 학생들은 먼저 학내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우선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학도호국단 해산과 학생회 재건이었다.

10·26 사태 이후 전국의 각 대학은 비상계엄령으로 휴교했다가 11월 16일 개강하였다. 개강 직후인 11월 22일 서울대 과회장들, 편집장들, 서클장들은 각각 성명서를 발표하여 학원을 조속히 민주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하였다. 특히 이날 열린 8개 단과대학 37개 과회장 연석 회의에서는 과회장, 서클장, 편집장을 중심으로 하는 ‘학생회부활추진위원회’(이하 학추위) 결성을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11월 27일 학생회관 라운지에서 7백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학추위를 정식으로 결성했다. 학추위는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단과대학 대표 각 1명, 서클장 대표 2명, 편집장 대표 1명, 대학신문사 대표 1명 등으로 집행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집행위원회는 대학 자치를 위한 학생회의 부활을 기본 목표로 활동했고 학내 문제 전반에 관해 학생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대표하였다. 아울러 학내 문제별로 학생활동소위원회, 학내언론소위원회, 학칙개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각각의 문제를 연구, 검토하였고 학생회 구성 문제는 전체 위원이 함께 연구, 검토하였다.

학추위 집행위원회는 12월 28일 학내 문제에 대한 시안을 확정하고, 다음 해인 1980년 1월 8일 그 동안의 논의 결과를 집약하여 서울대학교총학생회회칙 시안을 만들었다. 1월 11일 학생회관 라운지에서 9백여 명이 모인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 이후 2월 초까지는 단과대학 학생회 구성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2월 5일 인문대학 학생 총회를 시작으로 각 단과대학 학생 총회를 열었다. 그 자리에서 단과대학 학생회칙을 검토하고 단과대학 학생회 구성에 관해 논의했으며 학도호국단 폐지와 학생회 부활의 당위성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단과대학 학생회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준비위원

들을 위촉했다. 2월 12일 모든 서울대생들의 의사를 모으기 위해 '제1차 서울대 학생 총회'가 학생회관 라운지에서 1천2백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각 단과대학 학생 총회에서 논의한 의견을 모은 「학원 민주화를 위한 우리의 결의」가 그 자리에서 채택되었다.

학교 당국도 학생회 문제에 관한 학생들의 입장에 동의하였다. 2월 1일 교수회관에서 학추위 집행위원회 학생들과 학사조정위원회 교수들이 만나 학생회 부활에 대한 서로의 입장이 기본적으로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학생들은 계속해서 학생처와 접촉하여 상호 의사를 교환하고 학생처에서 학생 총회 등 모임에 필요한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정부는 학원 민주화를 위한 대학 구성원들의 노력을 외면했다. 1980년 2월 16일 정부는 학도호국단을 그대로 둔 채 운영 방법만을 바꾸는 '학도호국단개정령'을 확정, 발표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은 이러한 외부 압력에 관계없이 총학생회 및 단과대학 학생회 구성 작업을 가속화하였다. 또한 학도호국단 폐지와 학생회 부활 등의 당면 과제는 비단 서울대만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학원 민주화를 추진하던 다른 학교들과 협력도 모색하였다. 그리고 2월 22일 학생회관 라운지에서 8백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2차 서울대 학생 총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교수님께 보내는 건의문」과 함께 서울대, 고려대 등 5개 대학 공동 명의의 「학원 민주화를 위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동시에 학도호국단 구성을 저지하고 학생회를 재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등록 기간 중 징수해 오던 학도호국단비의 납부를 거부하고 학생회비를 각 학과에서 자율적으로 수납하기로 결정하였다.

1980년 3월 신학기를 시작하자 3월 3일에서 8일 사이 각 단과대학 학생 총회를 다시 개최하였다. 학생들은 학도호국단의 문제점을 성토했고 학생회 부활의 당위성을 역설하면서 새로운 학생회칙을 제정하였다. 대부분의 단과대학 학생회칙에 학생 저항권을 명기하였고, 나아가 여학생회 신설, 대의원회 권한 확대, 감사권 도입, 학생 언론 편집권 보장 등을 회칙으로 정했다. 3월 17일부터 각 단과대학에서 학생회 구성을 위한 선거를 시작하여 25일에 각 단과대학 학생회 재건을 완료했다. 단과대학 학생회와 함께 총학생회도 재건했다. 3월 15일 26동에서 열린 임시 총 대의원 대회에서 학생회칙을 확정하였고, 3월 28일 학생회관 라운지에서 연 총 대의원 회의에서 총학생회장을 선출하였다. 총학생회를 재건한 후 그 동안 학생회 재건에 앞장선 학추위는 구성한 지 120일 만에 해체하였다.

새로 마련한 회칙에 따라 총학생회는 산하에 총대의원회, 운영위원회, 학생활동위원



회, 집행위원회를 두었다. 총대의원회는 총학생회의 최고 의결 기구로서 각 과회장과 각 계열 대표로 구성하며, 총학생회의 회장과 부회장을 선출하고 사업, 예산, 결산 등을 심의하는 기능과 학칙 개정을 건의하는 권한을 가졌다. 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 부회장, 단과대학 학생회장, 총여학생회장 등으로 구성하여 총학생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맡고 그 집행을 담당하는 실질적인 업무 기구였다. 운영위원회 산하에는 총무부, 문예부, 사회부, 체육부 등 집행부가 있었다. 학생활동위원회는 학술 분과와 언론 분과를 산하에 두고 학생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였다.

1980년에 재건한 학생회는 1975년 해체될 당시의 학생회에 비해 규모를 확대하고 기능도 강화하였다. 분산되어 있던 단과대학들이 대부분 관악 캠퍼스로 모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는 또한 10·26 사태 이후 사회 전반에 고양된 민주화의 열기를 반영하였다. 재건한 학생회는 곧바로 여러 가지 활동을 개시하였다. 먼저 학생 활동의 방향을 제시하고 학생 운동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으로 1980년 4월 모두 24개 조항으로 된 '학생 권리 헌장' 시안을 발표하였다. 학생 권리 헌장은 크게 학문의 자유, 학생 활동의 자유, 학생 신분의 보호, 학생의 사회 참여 등을 강조하였다. 학교 당국 역시 총학생회 활동을 지원하였다. 4월 3일 학장회의는 학도호국단과 지도 교수제 폐지, 학생 자치 기구 인정을 골자로 하는 학칙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문교부에 제출한 이 개정안은 학생회를 학생 자치 기구로 인정하였다. 또 학생 활동의 사전 심의를 없애며 학생들의 간행물 발간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이러한 학칙 개정안은 당시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수들 사이에서도 학원 자유화에 대한 열망이 컸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대학원생들 사이에서도 자치 조직 구성을 위한 논의가 일어났다. 인문대학과 사회과학대학 대학원생들을 중심으로 4월 11일 '인문대·사회대 대학원자치협의회'를 구성하여 그 아래 상임위원회와 대의원회를 두었다. 대학원자치협의회는 학문 상호 간의 긴밀한 유대를 위하여 공동 연구 모임을 결성하고 대학원 자체의 언론을 확보하기 위해 회보 발간을 추진하였다. 학내 구성원 다수의 지지 속에 출범한 학생회는 기존의 학도호국단체제에서는 불가능했던 4·19 기념제를 거행하는 등 학원과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바야흐로 긴 겨울이 끝나고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서울의 봄'이 찾아왔다.

그러나 재건한 학생회는 불투명한 정치 상황 속에서 문교부의 인준을 받지 못했다. 학장회의에서 잠정적인 승인을 받았을 뿐이었다. 그리고 5·17 쿠데타로 각 대학에 휴교령이 내려지면서 어렵게 재건한 학생회는 다시 해체되고 학도호국단이 계속 실질적

인 학생 대표 기구로 남았다. 이로써 10·26 사태 이후 활발하게 전개한 학생회 재건 시도는 일시적으로 성공하는 듯 보였으나 결국 한순간에 좌절되고 말았다.

### 3) 학도호국단의 민주화

1980년 5·17 쿠데타 이후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중심으로 군부의 실세가 정치 전면에 등장하면서 학생회 부활 시도는 좌절되었다. 학생회 부활의 실패는 학도호국단 체제로 복귀하는 것을 의미했다. 전국의 각 대학이 휴교 상태이던 1980년 7월 문교부는 새로운 '학도호국단 규칙 준칙'을 각 대학에 시달하고 학도호국단의 재조직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대도 학도호국단을 재구성하였다. 재구성한 학도호국단은 이전의 틀을 그대로 둔 채 일부 부서의 명칭만 바꿨다. 1980년 이전 학도호국단은 교직원도 포함하는 조직이었던 데 반해 새로운 학도호국단은 학생들만의 조직이었다. 학년 단위 편성을 학과 단위 편성으로 바꿨고, 사단, 연대와 같은 편제 명칭을 최고제대(전체), 중간제대(단과대학별), 단위제대(학과별) 등으로 고쳤다. 또 임원 명칭도 과거의 사단장, 연대장 등 군대식 명칭에서 총학생장, 단과대학 학생장, 과학성장 등으로 바꿨다. 모든 임원을 총장이 임명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과학생장은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하고, 단과대학 학생장은 과학생장들 가운데서 호선(互選)하여 학장이 승인하고, 총학생장은 단과대학과 과 학생장들이 호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는 방식을 택하였다.

1982년부터 과학생장은 학과장의 책임 아래 학과 구성원들의 직접 비밀 투표로 선출하였다. 과학생장 선거는 보통 11월 말에 진행했고, 여기서 뽑힌 과학생장들이 모여 12월 초에 단과대학 학생장을 뽑았다. 그리고 12월 중순 총학생장에 대한 간접 선거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선출된 학도호국단 간부들이 다음 연도의 학도호국단 활동을 이끌었다. 학생장 후보 자격을 살펴보면, 과학생장은 현재 2·3학년 학생으로 4학기 이상 등록한 자(단, 의·치예과는 1학년 2학기 이상 등록), 평점 평균이 2.7이상으로 근신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사상이 건전하며 지휘·통솔력이 있는 자로 되어 있고, 단과대학 학생장은 과학생장인 자, 총학생장은 각급 학생장인 자로 되어 있었다. 과학생장 선거 절차의 경우, 먼저 입후보자는 선거 5일 전까지 학과 학생 추천서(5명 이상)와 입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학과에 제출했다. 선거 운동은 1회에 한하여 합동 소견 발표회를 할 수 있었으며 개별 선거 운동도 가능하였다. 또 선거관리위원을 선정하여

투 개표를 관리하도록 했다.

학생들이 학도호국단 간부 선출에 참여하면서 학도호국단은 조금씩 민주화하기 시작했다. 1981년 2학기 축제를 둘러싸고 학생들과 큰 갈등을 일으켰던 학도호국단은 1982년도에 학생 참여를 통해 새로운 간부진을 구성한 후 학생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대변하기 위해 노력했다. 2학기에는 처음으로 집회를 주도하였다. 이때 학도호국단 집회는 이전의 집회와 많이 달랐다. 학도호국단은 집회를 열면서 마당극, 노래 공연과 같은 문화 행사를 함께 주최하여 이전의 집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 줬다. 또한 이전의 집회와 시위는 한 사람의 주동자가 시작하고 소수가 합류하는 산발적인 방식이었는데, 학도호국단이 주도하는 집회는 많은 학생이 한꺼번에 참여할 수 있었다. 학도호국단 간부들은 학도호국단을 이용하여 더 많은 학생들을 집회와 시위에 끌어 모으려 했다. 학도호국단 집회에서 문화 행사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시위로 발전하였다. 학도호국단은 점차 학생 운동 중심 세력들이 주도하는 학생 자치 조직으로 변하였다. 학내에서 학도호국단 간부가 이끄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면 주동 학생은 처벌을 받고 강제로 군대에 징집되었다.

1980년대 전반기 학도호국단의 활동은 <표 5-2-2>의 학도호국단 예·결산 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학도호국단비는 1982년까지 1인당 7천5백 원이었고 1983년부터는 6천 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렇게 모은 학도호국단 예산은 표에서 드러나듯 대부분 학·예술 활동과 체육 활동에 사용했다. 이는 주로 축제와 관련하여 서클에 지원한 경

<표 5-2-2> 서울대학교 학도호국단 예·결산 내역(1982년)

(단위: 천 원)

주요 항목	세입액	결산액	잔액
행정 관리	85,435	46,803	28,632
학예술 활동	127,712	98,902	28,810
체육 활동	96,552	81,843	14,709
취미 및 레크레이션 활동	350	2,006	-1,656
학풍 쇄신 및 호국단 질서 확립	28,939	21,844	7,095
새마을 사업 및 봉사 활동	12,216	1,610	10,606
각종 수련 활동 강화	4,304	4,084	220
예비비	1,459		1,459
기타	1,190	1,727	-537
계	331,157	258,819	72,338

출전: 『대학신문』 1983년 3월 28일

비였으며, 1983년부터는 각 학과에도 배분했다. 반면 봉사 활동은 부진을 면치 못했다. 1983년과 1984년 예산 역시 같은 양상을 보이는데, 단 학·예술 활동 예산은 큰 폭의 증가를 보이는 한편 체육활동 예산은 소폭 감소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대학 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하고 서클 활동이 점차 활성화하는 분위기 속에서 일어났으며, 학도호국단의 민주화 경향과도 관련이 있다. 그리고 민주화한 학도호국단은 이후 학생 운동 발전과 학생회 재건의 토대가 된다.

## 제 4 절 학생회 재건과 대중화(1984~2006년)

### 1) 학원 자율화 조치와 학생회 재건

학생들의 반정부 시위가 격해지던 1983년 말, 정부는 일련의 '학원 자율화' 조치를 취하였다. 1983년 12월 21일 구속 학생 석방, 제적 학생 복교, 해직 교수 복직 등으로 시작한 학원 자율화 조치는 이듬해 캠퍼스에 상주하던 경찰 병력을 철수하면서 더욱 구체화하였다. 그 동안 강경 일변도의 학원 정책을 고수하던 전두환 정권이 이렇게 입장을 바꾼 이유는 정권이 어느 정도 안정 궤도에 올라섰다는 정치적 판단 때문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학원 자율화 조치는 학원 자율의 실질적이고 핵심적 관건인 학생 자치 조직에 대한 규제를 해제하지 않았고 학칙의 민주적인 개정도 수반하지 않았다. 이 조치는 전두환 정권이 학생 운동을 근본적으로 탄압할 명분을 축적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후퇴한다는 의미가 강했다. 한마디로 억압을 표면적으로 잠시 풀어놓은 것에 불과했다. 하지만 학생들은 오랜만에 찾아온 '유화 국면'을 최대한 이용하고자 했다.

교내에 주둔하던 경찰 병력이 철수한 후 캠퍼스는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학생들은 정부가 강요한 학도호국단을 해체하고 명실상부한 학생 자치 조직으로서 학생회를 다시 재건하고자 했다. 특히 학생 운동을 주도하던 학생들은 학생회를 단순한 학생 자치 조직을 넘어 학생 운동의 힘을 대중적으로 결집하는 기구로 만들기 원했다. 선도적인 소수 학생들만의 운동을 넘어 학생들의 대중적인 힘을 결집하는 데 학생회는 가장 적절한 기구였다.

먼저 학생들은 학원 자율화 조치의 허구성을 지적, 성토하였다. 1984년 3월 6일 도서

관 앞 아크로폴리스(이하 아크로)에서 학도호국단 주최로 약 1,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학원 자율화 조치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여기서 학내의 비민주적인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이 쏟아져 나왔다. 이는 자연스럽게 학도호국단 체제를 대신할 새로운 학생 자치 조직의 재건 논의로 이어졌다. 이어 3월 8일에 그 동안 학생 운동으로 제적된 학생들로 구성된 서울대복고대책위원회의 주최로 '서울대 제적 학생 3차 총회'를 열었다. 이날 총회에서 제적 학생들은 「학원 문제 백서」를 발표하였다. 제적 학생들은 「학원 문제 백서」에서 학내 문제점으로 비민주적 학칙, 비판이 허용되지 않는 학내 언론,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 학생 활동, 비민주적인 학생 자치 조직 등을 지적하고, 지도 휴학과 강제 징집 폐지, 학원 사찰 중지를 요구하였다. 3월 9일에는 학도호국단 주최로 700여 명이 아크로에 모인 가운데 공개운영위원회를 열었고 학생들은 이 자리에서 '학원자율화추진위원회'(이하 학자추) 구성을 결의하였다. 또 3월 5일과 9일에는 서클대표자회의와 편집장회의를 각각 열어 학내 언론 활동에 대한 대학 당국의 규제 조치 철폐를 주장하였다.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학원 자율화 조치는 학생들이 그 동안 박탈당했던 학생 자치와 학원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분출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학생 자치와 학원 민주화를 향한 학생들의 노력은 계속되었다. 각 학과와 단과대학에서 학자추를 속속 구성하였다. 3월 14일 아크로에서 2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학원자율화추진위원회 1차 총회'를 열었고, 이어 3월 16일 위원장을 선출함으로써 학자추 구성을 마쳤다. 이어 학원 자율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채우기 위한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였다. 학내 언론 기관의 협의 기구인 언론협의체와 서클들의 연대 기구인 서클연합회를 각각 구성하여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학자추는 기관지 『아크로폴리스』를 창간하였고 언론협의체에서는 『자유 언론』을 발행하였다. 2동, 8동, 12동, 학생회관 등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는 이른바 '자유의 벽'을 설치하여 각종 대자보(大字報)와 성명서, 소식지 등을 게시하였다. 이를 제거하려는 학교 당국과 그에 맞선 학생들 사이에서 마찰이 있었지만, 이는 1980년대 중반 이후 대학가를 풍미한 '대자보 문화'의 출발점이 되었고 학생 자치와 사회 민주화를 주제로 다양한 토론과 논쟁을 벌이는 계기가 되었다.

3월 23일에는 학원 자율화 조치 이후 처음으로 교수와 학생의 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학생처장은 학자추를 학도호국단의 자문 기구로 인정하면서 기타 학칙 개정 문제 등을 점진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학자추를 공식적인 학생 자치 조직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학교 당국의 소극적 태도에 반발하였다. 4월

2일 학도호국단과 학자추 대표 12명은 학자추를 공식 기구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단식 농성을 했다. 학생들은 4월 3일 교수들에게 공개 간담회를 요구했고, 4월 6일 아크로 집회와 4월 10~12일 '민주화 총회'를 열었다. 학생들은 이후 발표한 「학원 민주 선언」에서 학원 자율화의 전제가 사회 민주화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회 민주화를 위한 운동에 초점을 맞추기로 결의했다. 실질적인 학원 자율화는 학내 운동만으로 달성할 수 없으며, 결국 정권을 포함한 사회 전반의 민주화 문제와 연결된다는 논리였다. 학생들의 이러한 인식은 학교 당국, 나아가서 전두환 정권과 학생들의 첨예한 갈등을 예고하였다.

1984년 여름 방학 기간에 학생들은 학도호국단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학생 자치 조직을 만들기 위해 '학생대표기구개선협의회'를 결성했다. 학도호국단, 학자추, 언론 협의회, 서클협의회의 대표들이 참가한 이 기구는 치열한 내부 논의를 거쳐 학생회 재건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학생대표기구개선협의회는 9월 1일 학생회칙 시안을 만들어 공표하였고 9월 6일에는 명칭을 '학생회부활추진위원회'로 바꾸었다. 9월 14일에는 학생 총회를 거쳐 새로운 학생회칙을 통과시켰는데 이미 1980년 '서울의 봄' 당시 마련한 학생회 회칙을 상당 부분 그대로 원용하였다. 9월 19일부터는 총학생회장 선출을 위해 입후보자 합동 유세를 시작하는 등 학생회의 재건을 위한 노력은 절정에 이르렀다.

학생회 재건에는 많은 어려움도 따랐다. 9월 17일 경찰과 정보 기관을 위해 학교에서 정보를 수집한다는 혐의로 학생들이 가짜 학생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서울대 프락치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으로 학생회 재건을 주도하던 일부 학생들은 구속과 제적을 당했다. 학생들은 중간고사를 거부했고 학교 당국은 경찰력 투입으로 맞섰다. 9월 21일 학생회장 선거 유세 도중 학교 당국은 아크로에 설치한 앰프의 전원을 차단하였다. 이에 격분한 학생들이 본부 총장실에 들어가 총장에게 항의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이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학생들은 9월 25일과 26일의 투표를 통해 이정우(공법학과 4학년)을 총학생회장으로 선출하여 23대 총학생회를 구성했다. 총학생회 구성과 동시에 학도호국단 간부들은 사퇴하고 해체를 선언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학생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학생회를 재건하였다.

1984년도 총학생회장 선출 방식은 1975년 이전과 차이가 있었다. 1975년 이전의 총학생회장은 단과대학 학생회장들이 모여 그들 중에서 선출하였다. 좁은 의미에서 당시 총학생회장은 단과대학 학생회장들의 대표였다. 그러나 1984년부터 총학생회장은 단과대학 학생회장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 선출하였다. 이것은 당시 학

생 운동이 지향하던 ‘학생 운동의 대중화’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였다. 학생회 재건을 계기로 학생 자치가 구현되고 학생 운동도 대중화하기 시작했다. 이로써 ‘대중적’ 학생 운동의 기반이 놓였다.

## 2) 학교 당국의 학생회 인정

학생회를 재건하고 학도호국단을 해체했지만 문교부와 학교 당국은 학도호국단 이외의 단체는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1984년에 재건한 학생회 회장단은 곧바로 ‘프락치 사건’과 ‘민한당사 농성 사건’의 연루자로 몰려 제적당했다. 이에 학생들은 “학생회 사수”라는 슬로건 아래 수업 거부, 시험 거부로 저항했고 결국 교내에 경찰이 다시 투입되었다. 나아가 학생회를 불법적인 임의 단체로 규정하면서 학교 당국이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 학생회 활동은 난관에 부딪혔다. 학생들은 학생회비의 자체 수납과, 서적 할인 판매, 일용품 판매 등의 비상 대책을 마련하여 예산을 확보하고자 했다.

하지만 학생회 재건에 대한 학생들의 열망을 정부가 계속 외면할 수는 없었다. 1985년 1월 문교부는 호국단의 폐지와 학생회의 부활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그것은 대학교육협회의 ‘학도호국단개편 및 학생자치기구신설을 위한 건의안’을 받아들이는 형식이었다. 당시 문교부는 학생회 재건의 전제 조건으로 이른바 ‘문교부 5원칙’을 제시하였다. 문교부 5원칙은 학생회 회칙 속에 학생들의 정치 활동 금지, 지도위원회 설치, 학생회비 집행의 감독, 학생 대표의 자격 제한, 학생 대표의 교수회의 참석 금지 등의 조항을 반드시 삽입해야 한다는 요구였다. 이는 당시 자율적인 학생회 구성을 염원하던 대다수 학생들의 의사와 거리가 있었다. 학생들은 문교부의 원칙이 자유로운 학생회 활동을 근본적으로 제약한다고 비판하였다.

학생들은 1985년 2월 19일 ‘총학생회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3월 4일 개강을 맞아 자체적으로 학생회칙 시안을 마련하고 학교 당국과 조정 작업을 벌였다. 그러나 학생들과 학교 당국은 문교부 5원칙의 적용 문제를 놓고 의견이 맞서 합의를 하지 못했다. 이후 학교 당국이 방관하는 가운데 학생들은 단과대학 학생회 구성을 마치고 총학생회 구성에 착수했다. 3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 총학생회장을 뽑기 위한 합동 유세를 열었다. 연일 수천 명의 학생이 아크로에 운집한 가운데 선거 열기가 절정에 이르렀다. 당시 각 후보자들은 선거 공약과 연설에서 학내 문제는 거의 거론하지 않았다. “대통령

직선제로의 개헌”, “광주 항쟁의 진상 조사”, “민주 영령 추모 대회 개최” 등 전두환 정권이 금기하던 민감한 문제들을 거론하면서 정권의 도덕성을 정면으로 공격하고 사회 민주화를 강조하는 등 정치적 쟁점이 대중을 이루었다. 같은 해 2월 12일 총선을 계기로 분출하기 시작한 민주화에 대한 전 국민적 열망은 총학생회 선거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유세를 마친 후 4월 3일에 끝난 투표에서 김민석(사회학과 4학년), 강영근(산업공학과 4학년)이 각각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으로 당선되었다. 또 같은 날 끝난 총여학생회장 선거에서 이진순(사회학과 4학년)을 선출하여 총여학생회도 구성하였다. 새로이 출범한 총학생회는 산하에 총무부, 사회부, 문화부, 체육부 등의 부서와 ‘민중민주와 민족자주를 위한 투쟁위원회’, ‘광주사태진상규명위원회’, ‘광주항쟁계승위원회’ 등의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이후 학생회는 활동의 중심을 사회 민주화 실현에 두고 이를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하였다. 자연히 학생회와 정부 사이에서 심각한 갈등이 생겼다. 학교 당국이 학생회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 학생회비의 지출 등 예산 지원을 차단하여 학생회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경찰은 학생 운동 관련 혐의로 학생회 간부들을 연행, 구속하였다. 총학생회장 김민석을 5월 ‘미문화원 점거 농성 사태’로 구속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였다. 이후 학생회장의 당선이 곧바로 수배, 도피, 구속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계속하였다. 1985년 9월 총학생회 선거에서는 김용철과 손영진이 당선되었지만 김용철은 당선 이전에 이미 구속된 상태였다. 1986년 1학기 총학생회장 김지룡도 유세 도중 수배되었다. 또한 일부 후보들의 공약을 빌미로 학내에 경찰이 투입되면서 선거가 난항을 거듭하기도 했다. 1986년 2학기에는 총학생회장을 비롯하여 사회부장, 여학생회장 등 집행부 대부분이 구속되어 학생회 기능이 마비되었다. 1987년 1학기 선거에도 기호 1번 최정규 후보와 기호 2번 이남주 후보 모두 경찰의 수배를 받았다. 이 선거에서 이남주가 당선되었지만 8월 12일 결국 구속당했다.

학생회장과 학생회 간부가 구속, 수배당하는 상황에서도 학생들은 총학생회를 정식으로 인정받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다. 그런데 당시에는 어렵게 총학생회가 출범하더라도 학교 당국이 승인하지 않아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없었다. 1985년 이후 징수한 학생회비는 졸업생들에게 그대로 돌려 주었다. 학생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학교 당국의 학생회 인정과 예산 지원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였다. 1987년 6·10 항쟁으로 사회 전반에 민주화가 진행되기 시작하자 6·10 항쟁의 주역인 학생들은 학교 당국에 총학생회 인정을 더욱 강력히 요구했다. 1987년 8월 28일 총학생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총



학생회 회칙의 개정 시안을 마련하였다. 그 후 9월 8일에 열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약칭 전학대회)에서 총학생회 회칙을 결정하고 학교 당국과 협상에 임했다. 학교 당국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 것은 이른바 ‘문교부 5원칙’ 가운데 ‘학생의 정치 활동 금지’ 조항의 총학생회 회칙 반영 여부였다. 학생들은 회칙에 “총학생회는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을 실현하며 대학의 자치를 완전히 실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는 문구를 명시했지만 학교 당국은 이 문구의 수정을 요구했다. 결국 협의 과정에서 이 문구를 “사회의 봉사에 능동적으로 기여한다.”라는 완곡한 표현으로 수정하였다. 이로써 총학생회는 학교 당국으로부터 공식적인 인정을 받았다.

학교 당국이 총학생회를 인정한 후 개정된 회칙에 따라 총학생회 선거를 다시 치렀다. 선거 결과 박홍순과 이종일이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으로 당선하였다. 새로 구성된 총학생회는 9월 29일 학생 5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1984년 이후 처음으로 공식 출범식을 가졌다. 학교 당국도 1987년 2학기 학생회 예산으로 7,400만 원을 책정하고 그 배분 비율을 45(총학생회): 5(서클): 50(단과대학 학생회)으로 정하는 한편, 각 단과대학 학생회에 등록생의 인원과 등록 비율에 따라 배분하기로 결정하였다. 1975년 정부가 강제로 학도호국단을 설치하면서 해산된 총학생회는 이후 12년 만에 공식 인정을 받았다. 1984년 재건하고 1987년 인정받은 총학생회는 지금까지 큰 틀의 변화 없이 서울대를 대표하는 학생 자치 조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 3) 학생회론과 학생회 선거

1984년 학생회 재건 이후 학생 운동과 학생회는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었다. 학생 운동의 대중화를 모색하는 가운데서 학생회를 재건했고 재건한 학생회는 학생 운동의 대중화에 큰 역할을 했다. 이후 학생회의 역사가 곧 학생 운동사가 되었다. 그러나 재건 당시 학생회는 아직 학생 운동의 중심이 아니었다. 1980년대 중반 학생 운동의 중심은 ‘삼민투’, ‘민민투’, ‘자민투’ 등 투쟁 조직들이었다. 이 당시 학생회의 위치는 “학생 운동의 질적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이념적인 선도체인 ‘삼민투’가 학생회 운동의 방향을 지도해야 하며 학생회는 삼민투를 위한 보조적 대중 자치 기구이다.”라는 학생회에 대한 ‘삼민투’의 정식화에서 잘 드러난다. 따라서 학생회라는 학생 자치 조직을 통해 학생 운동이 활성화하는 계기는 마련했으나, 학생회는 학생 운동의 외피로서 도구 역할만

을 하는 조직에 머물렀다.

하지만 1987년 6·10 항쟁 과정에서 학생회는 학생 운동의 중심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였다. 학생회는 광범위한 학생들을 군사 독재에 항거하는 학생 운동의 대열에 결집시켰다. 또한 학생회는 민주화를 향한 학생들의 의지를 담은 유일한 그릇이었다. 더 이상 이전의 협소한 선도적 학생 운동 조직으로는 다수 학생들의 의지를 담을 수 없었다. 6·10 항쟁은 대규모 학생 운동을 할 수 있는 틀을 필요로 했다. 학교에서는 총학생회가, 전국에서는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약칭 전대협)같은 학생회 연대 조직이 그 역할을 했다. 이때부터 학생회를 통한 대중적 학생 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1987년 6·10 항쟁 이후 학생 운동에서 학생회가 차지하는 위상과 비중이 높아지면서 한국 사회의 변혁 방법과 지향을 둘러싸고 입장을 달리하던 학생 운동 세력들, 즉 학생 운동 정파들은 학생회를 자신들의 노선에 따라 운영하기 위해 학생회 선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각 학생 운동 정파들은 학생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다양한 입장을 내놨고, 이러한 입장은 학생회 선거 때마다 '학생회론'이라는 이름으로 쟁점이 되었다. 먼저 제기된 학생회론은 1987년 당시 학생 운동을 주도한 'NL(민족해방) 진영'의 '전투적 학생회론'이었다. 전투적 학생회론은 학생회의 중요성에 새롭게 주목하였다. NL 진영의 전투적 학생회론은 학생회가 가장 광범위하게 대중을 결집시킬 수 있는 조직, 대중 의식화와 조직화의 가장 유용한 공간이라고 여겼다. 이는 이미 1987년 6·10 항쟁 과정에서 직접 경험한 내용이었다. 전투적 학생회론은 학생회의 위상을 전체 학생들이 자주적으로 참여하는 자치 조직으로 규정하였다. 또 학생회 간부를 유능한 학생들로 구성하여 학생회 간부의 헌신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전까지의 비합법적, 선도적 학생 운동에서 학생회를 통해 더 많은 학생이 참여하는 대중 운동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전투적 학생회론은 학생회 정착에 큰 기여를 했다. 지금까지 중요하게 남아 있는 전학대회, 운영위원회 등 학생회 기구들은 바로 전투적 학생회론에 입각한 사업을 하면서 만들어졌다. 1987년 총학생회와 단과대학 학생회의 경우 집행국이 사실상의 운영·집행 기구였지만, 1988년 2학기에는 총학생회 운영위원회가 상임 의결 기구로 자리 잡으면서 대표 기구와 집행 기구의 위상이 명확하게 구분되었다. 이어서 전학대회와 과 학생회의 역할을 강화하였으며, 한편 부문 계열 운동의 활성화, 과 학회, 과 운영위원회의 안정화 등 의결 체계의 하향적 확대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였다. 또한 1988년 1학기에 구성한 30대 총학생회가 '6·24 총장실 점거 사건'과 관련한 학생회 운영 실패의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자, 이를 계기로 학생회 혁신에 대해 본격적으로 고민했다. 1989년 1학기에 구성된 32대 총학생회는 최초로 1년 단위로 사업을 벌였고 11월 선거에서 다음 해를 책임질 33대 총학생회장을 선출하였다. 이때부터 총학생회는 1년 단위의 활동과 11월 선거라는 안정적인 재생산 구조를 확립하였다. 이와 같이 전투적 학생회론은 학생 운동의 대중화와 학생회의 조직 강화에 큰 역할을 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다양해지는 학생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한 채 학생회를 단순한 정치 도구로 보는 전투적 학생회론이 비판받기 시작했다. 그 결과 NL 진영 내부에서 전투적 학생회론을 대신하여 ‘자주적 학생회론’이 새롭게 등장하였다. NL 진영은 전투적 학생회 노선의 정치 편향성을 극복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학생들과 더욱 긴밀하게 결합해야 한다고 느꼈다. 자주적 학생회론은 학생회 하부 조직을 활성화하여 일반 학생들을 폭넓게 참여시키고자 했다. 이를 위해 ‘분임 토의’의 활성화와 ‘총회 투쟁’을 적극적으로 제기했다. 자주적 학생회론의 문제의식은 전체 학생을 대표하는 자치 기구인 학생회에 학생들이 스스로 일상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학생들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요구를 학생회 안에서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학생회는 학생들의 ‘자주성’에 기초해서 튼튼하게 서고 움직여야 했다. 자주적 학생회론의 단초는 이미 1988년 2학기에 총학생회 산하에 구성된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이하 학자추)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학자추는 학생들의 자주적 권리를 되찾기 위해 학교 당국에 기성회비의 사용 내역 공개, 소비조합 운영의 비민주적 요소 제거, 동아리연합회의 자치 공간 확보 등을 요구하였다. 1989년도 1학기 총학생회장에 당선한 문광명 역시 “학생회란 학생 대중의 이해와 요구에 근거한 자주적 대중 조직이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자주적 학생회론에 입각한 일상적 사업은 사실상 결가지에 불과하였다. 학생회는 여전히 정치 사업을 더 우선시했다.

1990년 33대 총학생회를 새롭게 등장한 ‘PD(민중민주) 진영’에 내준 NL 진영은 1990년 가을에 치른 34대 총학생회 선거 때부터 본격적으로 자주적 학생회론을 제기하였다. 선거 당시 NL 진영의 이철상, 조형곤 후보는 “학생회는 학생들의 이해와 요구에 근거하는 조직”이라는 자주적 학생회론을 분명하게 주장했다. 이에 PD 진영에서는 학생회가 무조건 학생들의 이해관계와 요구에 근거하는 것은 “대중 추수주의”에 불과하다고 비판하였다. 선거 결과 NL 진영이 승리하였지만, 1991년도 34대 총학생회 역시 당시 긴박하게 진행된 ‘1991년 5월 운동’에 전력을 기울였고 일상적 사업 중 실제로 추진한 것은 식당 관련 사업 정도밖에 없었다. 1991년 가을에 치른 35대 총학생회 선거에

서는 학생회론 자체가 선거의 쟁점으로 부상했다. PD 진영은 ‘민주적 학생회론’을 제시하고 학생회에서 민주주의를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그 동안 학생회를 주도하던 NL 진영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었다. NL 진영의 태재준, 송욱 후보는 자주적 학생회론을 다시 강조하였다. 이들은 학생회가 생활 속의 민주주의를 담는 그릇이자 진보적 삶을 담는 넓은 마당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 결과 NL 진영이 다시 승리하였다. 하지만 1992년 35대 총학생회 역시 총선과 대선이라는 정치 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이전 학생회와 별다른 차이를 보여 주지 못했다.

‘문민 정부’가 들어선 1993년은 학생회 역사에서 중요한 전기가 되는 해였다. 우선 1993년 가을에 치른 37대 총학생회 선거에 유례없이 5개의 선거 운동 본부(이하 선본)가 후보를 출마시켰다. 많은 선본의 난립은 학생 운동 세력들이 재편성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이후 선거에서도 계속 이어졌다. 1990년대 이후 서울대 총학생회 선거에 많은 선본이 출마하는 현상은 다양한 학생 운동 세력이 다른 학교보다 먼저 분화하고 경쟁하며 공존하는 서울대만의 독특한 모습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1993년 36대 총학생회를 맡은 NL 진영은 1992년 가을 36대 총학생회 선거 때부터 자주적 학생회론을 더 심화한 ‘생활 학생회론’을 전면에 내세웠다. 생활 학생회론은 1990년대 학생들의 가치관과 생활 양태의 급격한 변화에 발맞춰 제기되었다. 즉, 정치 운동 중심이던 과거 학생회 활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일반 학생이 중심인 새로운 공동체 운동을 개척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학생회의 중심 이동을 통한 생활 진보의 구현”은 이후 NL 진영, 특히 서울대를 중심으로 한 ‘NL 좌파(비주사 NL)’의 기본 입장으로 자리 잡았다. 1993년 36대 총학생회가 단과대학 및 과 학생회 사업의 상대적 자율성을 보장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넓힌 것이나, 투쟁국을 정치국으로 전환하고 학원개혁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집행국 체제를 바꾼 것도, 학생회의 중심 이동이라는 생활 학생회론의 구체적인 실천 사례였다.

1993년 36대 총학생회의 생활 학생회론은 1994년 37대 총학생회의 ‘네트워크 학생회론’으로 더욱 구체화하였다. NL 좌파와 PD 진영의 일부 정파가 결합하여 조직한 ‘21세기진보학생연합’은 37대 총학생회 선거에서 네트워크 학생회론을 내세워 당선되었다. 37대 총학생회는 학생회 강화라는 주장이 협소한 사고에서 비롯했다는 반성 하에, 다양한 주체가 활동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확대하고 대중 생활공간에서 학생들의 참여를 넓히고자 했다. 네트워크 학생회론도 이런 문제의식에 출발하였다. 네트워크 학생회론은 총학생회가 교육 개혁, 문예, 언론, 사회 연대 등 학생 활동의 기반이 되는 다양한

네트워크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생활 학생회론과 네트워크 학생회론은 실천에서 많은 비판에 직면하였다. 생활 학생회론을 주창한 36대 총학생회는 중심 사업을 학원 개혁 사업에만 국한해 기존의 정치 사업을 지나치게 축소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네트워크 학생회론을 주창한 37대 총학생회는 총학생회의 역량 부재로 다양한 학생 활동을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관 짓고 원활하게 소통함이 없이 파편적으로 진행하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 결과 1994년 가을에 치른 38대 총학생회 선거에서는 지난 2년 동안의 생활 학생회론과 네트워크 학생회론을 어떻게 평가할지, 즉 학생회 위상을 어떻게 재정립할지가 최대 쟁점이 되었다. PD 진영의 후보들은 네트워크 학생회론을 “단말기 없는 네트워크”라고 비판하고 “네트워크에서 센터네트로 전환”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네트워크 학생회론의 강화를 주장한 21세기진보학생연합이 다시 선거에서 승리하였다. 1995년 38대 총학생회는 출범식에 최초로 총장이 참석하고 학교 당국과 ‘학사행정개선논의모임’을 수시로 갖는 등 적극적으로 많은 일들을 해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정작 네트워크로 묶을 자치 영역이 축소되었다는 지적도 받았다.

1995년 가을 39대 총학생회 선거에서는 학생회론이 부각되지 않았다. 1995년 광주 학살자 처벌 운동의 열기에 자극받은 각 학생 운동 세력들은 선거 기간 동안 공허하고 추상적인 학생회론 대신 자신들의 정치적 지향을 이전보다 분명하게 드러냈다. 그중에서도 자신의 선본 이름을 “좌파”라고 명명한 PD 진영의 다수파(‘대장정학생연합’ 주도)는 “주류 질서의 전복”이라는 급진적 슬로건을 앞세워 장기간 총학생회를 장악해 온 21세기진보학생연합을 누르고 당선되었다. 하지만 급진적 슬로건과 선도적 문제 제기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정책과 학생회 운영 계획이 부재하여 1996년 39대 총학생회의 활동은 대중성이라는 측면에서 한계가 많았다. 이후 학생회 선거에서도 학생회론은 더 이상 쟁점이 되지 않았다. 그것은 이론으로서의 학생회론과 실제로 진행되는 학생회 활동의 불일치 때문이기도 했지만, 결정적으로는 1990년대 후반 이후 학생회가 학생들의 무관심 속에서 크게 약해졌기 때문이었다.

#### 4) 학생회 약화와 비운동권 학생회의 등장

학생 운동 세력은 학생회론을 펼 정도로 학생회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1990년대에

도 여전히 학생회를 유용한 학생 운동의 도구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다. 각 학생 운동 정파는 자파의 주장을 대중화하기 위해 학생회를 장악하려 했다. 학생회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은 대부분 특정 학생 정치 조직을 대표하였지만, 선거 운동 기간 중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분명하게 드러내기보다는 학생들에게서 표를 얻기 위해 세련되고 모호한 이미지로 자신을 어필하고 지키기 어려운 복지 공약을 남발하였다. 그리고 자파의 조직 역량을 총동원하여 소위 “조직표”의 확보에 열을 올렸다. 표면적으로 각 선본의 차이가 잘 드러나지 않았고 말꼬리 잡기 식의 상호 비방이 난무했다. 학생 운동 세력들끼리의 경쟁은 갈수록 뜨거워졌으나 학생들은 이미지 선거, 조직 선거에 염증을 느꼈다. 여기에 학생들의 정치적 무관심과 보수화까지 겹쳐 학생회는 점차 학생들로부터 멀어졌다.

그 결과 선거 투표율이 급격히 떨어졌다. 1992년 65.6%, 1993년 63.7%를 기록한 투표율은 1994년 가을 38대 총학생회 선거에서 55%로 떨어졌고, 급기야 1995년 가을에 치른 39대 총학생회 선거 때는 50%를 넘지 못하여(48%) 사상 최초로 연장 투표를 실시했다. 1996년 가을 40대 총학생회 선거에서 54.5%로 투표율이 조금 상승하였으나, 1997년 가을 41대 총학생회 선거에서는 50.3%로 간신히 50%를 넘었고, 1998년 가을 42대 총학생회 선거에서 다시 50% 밑으로 떨어져(47.4%) 연장 투표를 할 수밖에 없었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의견보다는 학생 정치 조직의 입장에 따라 일방적으로 운영되는 학생회의 비민주성에 대해서도 불만을 가졌다. 당선된 학생 정치 조직의 차이에 따라 총학생회와 각 단과대학 학생회가 불협화음을 빚는 경우가 많았고, 전학대회에서는 총학생회의 총노선에 대한 학생 정치 조직들 사이의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학생회 선거나 학생회 운영은 학생들과 유리된 학생 정치 조직들만의 전유물이 되었고 이 때문에 학생회의 대중성은 점차 약화했다.

동시에 1990년대 후반 학교 안팎의 상황은 학생회의 원활한 운영을 어렵게 만들었다. 내적으로 1995년부터 본격화한 ‘학부제’로 학생회 체계의 기초인 과 학생회가 해체되었다. 대개 과 학생회는 3학년이 대표를 맡고 2학년이 중심이 되며 1학년이 기초가 되는 구조였다. 그러나 학부제 또는 모집단위 광역화를 실시하면서 과에서 1, 2학년이 완전히 분리되었다. 학생들은 과 학생회의 대안으로 1, 2학년들을 임의로 나누어 묶은 ‘반 학생회’를 꾸렸지만, 과거 과 학생회처럼 결속력을 갖고 활발하게 활동하지는 못했다. 외적으로는 1996년 발생한 ‘한총련 사태’가 학생회의 골간을 흔들었다. 한총련 사태 이후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전대협을 계승하여 1993년 조직, 이하 한총련)이 크게 와해하면서 한총련-서총련(‘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총학생회-단과대학 학생회로 이

어지는 학생회의 기본 구조도 같이 흔들렸다. 더 이상 강력한 학생회 연합체는 만들어지지 않았으며 각 학생 정치 조직별로 소규모 학생회 연합체를 만들어 각개 약진할 뿐이었다. 또한 이전까지 자동으로 한총련에 속하던 학생회장들이 한총련 불법화로 당선 직후 곧바로 수배, 구속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학생회를 제대로 운영할 수 없었다. 결국 1990년대 후반에 들어와 학생회는 학생들의 무관심과 비판의 대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아래를 엮어 주던 고리가 다 끊기면서 위기를 맞이하였다.

학생회가 위기에 처해 있긴 했지만 1990년대 후반기에는 이전과 비슷한 경향으로 학생회 선거가 진행되었다. 학생 정치 조직 가운데 조직력에서 우세하던 21세기진보학생연합과 대장정학생연합은 1997년 40대 총학생회, 1998년 41대 총학생회, 1999년 42대 총학생회를 번갈아 맡았다. 그러나 이러한 양상은 1999년 가을 43대 총학생회 선거에서 완전히 바뀌었다.

1999년 가을 43대 총학생회 선거에는 예년과 달리 이른바 비운동권 선본이 돌이나 출마하였다. 그중 한 선본이 도중에 사퇴하여 홀로 남은 ‘광란의 10월’ 선본은 비운동권의 상징으로 부각하였다. ‘광란의 10월’ 선본은 선본 이름만큼이나 선정적인 “X같은 게 X같은 거지”라는 모토로 학생들의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이 선본은 선거 운동원도 별로 없었고 선거 운동도 거의 하지 않았다. 관례적으로 모든 선본이 참여하는 선본 공동 발족식과 공동 유세를 “학우들과 괴리된 채 진행되는 선본원들만의 잔치”라는 이유로 불참하고 대학신문사가 주관하는 후보자 토론회에도 불참하였다. 대신 개인 유세에서 힙합 그룹의 공연을 갖고 뮤직 비디오를 상영하여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선정적인 선본 이름과 모토 이외에는 특별한 정책이나 주장을 제시하지 않았다. 단지 모토를 통해 학생 운동 세력들이 운영하는 기존 학생회의 정치성을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선본 이름을 통해 축제 활성화와 문화 사업 강화를 공약했을 뿐이다. 하지만 투표 결과, ‘광란의 10월’ 선본은 연장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대장정학생연합 선본을 84표 차이로 간신히 물리치고 당선되었다. 1984년 총학생회 부활 이후 최초로 비운동권 학생회가 출범하는 순간이었다.

‘광란의 10월’이 운영한 2000년 43대 총학생회는 “문화 네트워크”와 “전자 민주주의”를 기조로 내세웠지만 그 어느 총학생회보다도 많은 비판에 직면했다. 2000년 상반기 전학대회에서 대의원들의 거부로 총기조가 부결되었고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들을 중심으로 하는 총운영위원회(이하 총운위)의 견제도 심했다. 게다가 총학생회 사업은 많은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선본 이름 ‘광란의 10월’이 상징하듯 총학생회가

심혈을 기울인 가을 축제의 경우, 행사 기간 동안 일어난 많은 추문으로 인해 총학생회는 큰 타격을 입었다. ‘광란의 10월’이라는 선본 이름은 다른 학교와 연대하여 여러 대학이 축제를 함께 치루겠다는 공약을 함축하였지만, 실제 가을 축제에서는 다른 학교의 춤 동아리나 밴드가 와서 공연하는 정도에 그쳤다. 그나마 어떤 공연은 여성 비하적이라는 비난도 받았다. ‘취업 박람회’의 경우 사전에 기업에서 막대한 돈을 받아 물의를 일으켰고, ‘통일 콘서트’는 보수 정치인과 10대 인기 댄스 그룹을 초청했다가 학생들의 반발로 결국 무산되었다. 졸업한 동문들에게만 판매하는 총학생회 발행 신문이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또 한 번 물의를 빚었다. 그밖에 총학생회장의 개인 사정으로 총학생회의 최고 의결 기구인 총운위가 자주 열리지 못하고 그 동안 꾸준히 열린 전학대회가 처음으로 무산되는 등 임기 말 43대 총학생회는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한마디로 사상 최초의 비운동권 총학생회 실험은 총학생회 담당자들의 준비와 능력 부족으로 비운동권이라는 상징만을 남긴 채 실패로 돌아갔다.

2000년 가을 44대 총학생회 선거에서 다시 21세기진보학생연합 선본이 당선되었다. 이 선거에는 무려 7개 선본이 난립하였으며 그중에는 비운동권 선본도 1개가 있었다. 이 선본 역시 ‘비운동권’이라는 이미지 이외에 특별한 선거 운동이나 정책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선거 결과 3위를 차지했다. 학생들 사이에 만연한 운동권에 대한 반감이 비운동권 선본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로 이어졌다. 2001년을 책임진 44대 총학생회는 정치 사업 대신 ‘교육 투쟁’과 ‘대학 개혁 운동’에 주력했다. 이는 학생들의 정치적 무관심이 커진 현실에서 한국사회의 문제와 학생들의 불만이 맞물리는 지점을 포착하여 이를 매개로 학생들과 소통하려는 시도였다. 이러한 시도는 대장정학생연합 선본이 당선된 2002년 45대 총학생회에서도 계속되었다. 2001년 가을 45대 총학생회 선거에서도 모두 7개 선본이 출마하였고 비운동권 선본도 2개가 출마하였다. 비운동권 선본은 운동권에 대한 선정적 비판과 만화방 설치와 같은 복지 공약만을 제시하는 데 머물러 선거 결과 5위와 6위에 머물렀다. ‘광란의 10월’ 이후 학생들의 반운동권 정서에 기대어 당선을 노리는 비운동권 선본이 계속 등장하였지만, 총학생회를 책임질 만한 능력과 비전을 보여 주지 못한 채 학생회 선거를 회화화하였다.

그런데 2002년 가을 46대 총학생회 선거에서 당선된 비운동권 선본 ‘서울대생, 학교로 돌아오다’(이하 ‘학교로’)는 이전의 비운동권 선본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이들은 선거 기간 동안 운동권을 비판하면서 자신들이 “준비된” 비운동권임을 강조하였다. 먼저 정후보와 부후보 모두 스누라이프 회장, 생활협동조합 학생위원장 등 다양한 학생 활동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선거 운동원들 또한 대부분 도서관자치위원회, 『서울대저널』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었다. 정책에서도 학생들의 인기를 얻기 위한 선정적이고 비현실적인 공약보다 학생들의 대학 운영 참여와 자치 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공약을 폭넓게 제시하였다. 그 결과 ‘학교로’ 선본은 2위 선본보다 무려 3배 가까운 압도적 지지로 당선되었다. ‘학교로’ 선본이 꾸린 2003년 46대 총학생회는 축제 활성화와 같은 대중적 활동에 주력하면서도 ‘기성회비 반환 운동’과 ‘이라크 파병 반대 동맹 휴업’ 등 정치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총학생회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도 대체로 호의적이었다. 이를 기반으로 46대 총학생회의 부총학생회장은 다음 선거에서 47대 총학생회장으로 다시 당선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과정은 그리 순탄치 않았다. 먼저 2003년 가을 47대 총학생회 선거에서 운동권 선본이 돌밖에 출마하지 않은 대신, 46대 총학생회와 연속성을 주장하면서 ‘학교로’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비운동권 선본이 둘이나 출마하였다. 이 선거는 3일 간의 투표와 2일 간의 연장 투표에도 투표율이 46.7%에 그쳤다. 이로 인해 1984년 총학생회 부활 이후 최초로 선거가 무산되고 다음 해 봄에 재선거를 했다. 1995년 가을 선거에서 처음으로 연장 투표에 들어간 이후 거의 매년 연장 투표를 했지만, 연장 투표에도 투표율이 50%를 넘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결국 2004년 4월 재선거에서 ‘학교로, 다시 쓰는 이야기’ 선본이 2위와 2배의 표차로 당선되었다. 봄에 치른 선거에 신입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투표율은 3일 만에 50%가 넘었다. 재선거 끝에 구성한 47대 총학생회는 46대 총학생회와 비슷한 기조로 활동하였고 특히 학생들 간의 “네트워크”를 강조하였다. 하지만 총학생회가 추진한 전문위원회 신설이 전학대회에서 부결되고 도서관 문제 해결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2년 간의 ‘학교로’ 총학생회 운영 이후 2004년 가을에 치른 48대 총학생회 선거에서 다시 대장정학생연합 선본이 ‘학교로’ 선본을 1천 표 정도의 차이로 물리치고 당선되었다. 대장정학생연합의 당선에는 21세기진보학생연합의 약화 소멸 이후 서울대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가지게 된 대장정학생연합의 조직력과 “학점 취소제”와 같은 교육 공약, 그리고 2000년대 이후 서울대 학생 운동의 주요 화두인 ‘여성주의’에 대한 적극적 입장 표명이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 선거에서는 총학생회 역사상 최초로 여학생이 총학생회장으로 당선해 화제가 되었다. 48대 총학생회는 “교육 공공성”을 기치로 등록금 인상 분 반환, 상대 평가제 폐지, 학점 취소제 쟁취 등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학교에서 등록금 인상률을 절반 정도 하향 조정하였고, 수강 신청 취소 기간을 수업 주 수 1/2선으로

연장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학생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부족했다. 48대 총학생회를 비롯하여 거의 모든 총학생회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 개혁의 차원에서 교육 투쟁을 벌였지만, 사안의 특성상 학교 당국과의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았다.

2005년 가을 49대 총학생회 선거에서는 기존의 ‘학교로’ 선본이 출마하지 않은 대신, ‘서프라이즈’라는 비운동권 선본이 출마하였다. ‘서프라이즈’ 선본은 정후보와 부후보 단 2명만으로 선본을 꾸렸고 선거 운동도 거의 하지 않았다. 단지, 기존 운동권 학생회가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비판하고 공약 불이행 시 자퇴를 약속했다. 또한 축제에서 유명 연예인 무료 섭외, 대학 문화 활성화 지원금 1억 원 확보 등 “절대 복지 실현”을 공약했다. ‘서프라이즈’의 행보는 이전 ‘광란의 10월’과 유사한 면이 있었다. ‘서프라이즈’ 선본은 대장정학생연합 선본과 각축을 벌였고 투표 결과 39표라는 근소한 차이로 1위를 차지하였다. 선거 규정상 결선 투표에 들어갔으나 결선 투표의 투표율이 50%를 넘지 못하여 2년 만에 다시 가을 선거가 무산되었다. ‘서프라이즈’ 선본은 2006년 봄 재선거에 다시 출마하였지만 대장정학생연합 선본은 이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다. 2006년 봄 재선거는 학생들의 무관심 속에서 매우 저조한 투표율로 인해 다시 무산될 위기에 빠졌다. 하지만 총학생회 구성 실패라는 초유의 사태를 막기 위해 많은 학생들이 연장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간신히 50%의 투표율을 넘어섰다. 개표 결과 ‘서프라이즈’ 선본은 2위 선본을 1천5백여 표차로 따돌리고 당선하였다. 그러나 ‘서프라이즈’ 선본이 운영하는 49대 총학생회 역시 이전 ‘광란의 10월’ 선본처럼 초기부터 많은 추문에 시달렸다. 특히 총학생회장의 부적절한 언행과 처신이 언론에 회자되면서 학생들 사이에서 탄핵 움직임이 나타났다. 총학생회장과 관련한 의혹들의 진상 규명을 위해 청문회까지 열렸다. 결국 2006년 6월 12일 임시 전학대회에서 총학생회장은 학생회칙에 따라 탄핵을 당했다. 학생들이 총학생회장을 탄핵한 것은 총학생회 역사상 최초로 벌어진 불행한 사태였다. 아무런 고민과 준비도 없이 오로지 학생들의 반운동권 정서에 기대어 무책임한 활동으로 일관하는 몇몇 비운동권 학생회의 모습은 오늘날 학생회가 처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다.

학생회는 약해졌지만 학생들은 여전히 학생회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2005년 10월 『서울대저널』의 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은 여전히 학생회에 무관심하고 비판적이었다. 학생회가 학생들의 뜻을 잘 대변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불과 11.7%만이 긍정했고, ‘보통이다’가 44.2%, ‘별로 잘 못했다’가 35.8%, ‘전혀 못했다’가 8.7%였다. 잘 대변하지

못하는 까닭으로는 58.4%가 '학생회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기 때문' 이라고, 또 47.6%는 '학생들이 무관심하기 때문' 이라고 답했다. 학생회 사업에 대해서도 48.7%가 '잘 알지 못한다'고 답했고, 15.2%는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그러나 2005년 9월 『대학신문』의 조사에 따르면 여전히 학생들의 78.3%는 총학생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단과대학 학생회의 필요성에 공감한 학생은 이보다 더 많은 81.4%에 이르렀다. 물론 학생들은 더 이상 정치 사업 중심의 학생회를 원하지 않는다. 학생들의 74.1%가 총학생회의 중점 사업으로 '도서관 문제나 셔틀버스 문제 해결과 같은 학생 복지 사업'을 꼽았다. '교육권 관련 사업'이라고 답한 비율도 46.0%였다. 반면 '통일 운동, 노동 운동 등 학내외 정치 사업'이라고 답한 비율은 5.5%에 그쳤다. 또한 미래의 바람직한 학생회 상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76.2%가 '전체 학생들의 의견을 조사하고 대표하는 역할'을, 59.3%는 '학생들의 복지 문제 해결을 대학 당국에 요구하는 역할'을 선택했다. 그러나 '학생회의 정치적인 입장이나 의견을 알리고 설득하는 역할'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10.2%에 그쳤다. 단과대학 학생회의 경우 65.5%가 학생 복지 사업에 주력해야 한다고 답했고, '공동체 내 소통과 친목을 위한 활동' (45.3%)과 '대동제나 새터 준비 등 문화 사업' (36.8%)을 해야 한다는 응답도 높았다. 앞으로 학생회는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학생들의 삶에 기반을 둔 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학생회는 시작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승만 정권은 학생회 대신 준군사 조직인 학도호국단을 만들어 학생들의 학문적, 사상적 자유와 자치 활동을 억압했다. 4·19 혁명으로 학도호국단이 해체된 후 비로소 학생회가 건설될 수 있었다. 당시에는 서울대의 연립 대학적 성격으로 인해 총학생회보다 단대학생회의 활동이 활발하였다. 그러나 학생운동과 관련한 외부 압력과 정치적 탄압에 직면하여 학생회 조직과 활동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1975년 긴급조치 9호 발동 이후 학생회는 강제로 해산하고 그 자리에 학도호국단이 부활하였다. 학도호국단 부활 이후 학생들의 자유로운 자치 활동은 위축되었다. 학생들은 학도호국단을 비판하면서 학도호국단 민주화와 학생회 재건을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1984년 학생회가 재건되었다. 재건된 학생회는 학생들의 자치 조직이자 학생 운동의 중심 기구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학생회를 도구로 사고하는 학생 운동 세력들의 과열 경쟁과, 학생들의 이해관계보다 정파의 이해관계를 우선하는 비민주적인 학생회 운영, 학부제나 한총련 사태와 같은 내우외환, 그리고 더 이상 학생회의 깃발 아래 일치단결하지 않는 학생들의 개인주의 등으로 1990년대 후반 이후 학생회의

영향력은 점차 약화했다. 2000년 이후에는 비운동권 총학생회가 여러 번 구성되기도 했지만, 학생회 선거와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무관심은 더욱 커졌다. 학생회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학생 운동 세력들은 학생회를 도구로 보는 과거의 인식을 과감하게 청산해야 하며, 학생들도 학생회가 복지만을 서비스하는 기구가 아니라 스스로 책임지고 만들어 가야 할 자치 조직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제도적으로는 학생회가 학교 당국에 학생들의 의사를 반영시킬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학생회와 학교 당국 사이의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학생들을 대학의 주체로 세울 수 있는 성숙한 학생회 활동과, 자치·자유 같은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는 학생들의 책임감이 함께 필요하다.



## 제3장 학생 운동의 발자취

학생 운동은 학생들이 학문과 연구의 자유, 대학과 학생의 자치를 추구하면서, 나아가서는 체제와 권력에 대한 비판 투쟁을 조직적으로 전개하는 정치 사회 운동을 의미한다. 학생 운동은 한국 근현대사에 큰 영향을 주었고 특히 사회 민주화에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 그 선두에는 언제나 서울대생들이 있었다. 학생 운동에 헌신한 학생들의 희생과 노력은 시대의 아픔이자 값진 유산이었다. 하지만 최근 학생 운동은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정치 중심의 학생 운동이 크게 약화된 대신, 다양한 새로운 운동들이 등장하였다. 이 글에서는 서울대 학생 운동의 발자취를 ‘선도성’, ‘대중성’, ‘다양성’이라는 특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자료는 기존 교사와 학생 운동 관련 연구 성과, 학보 『대학신문』, 교지 『관악』, 학생잡지 『서울대저널』, 기록관 소장 자료, 학생 정치 조직 문건, 일간지, 월간지, 학생 운동 참여자 증언 등을 이용하였다.

## 제 1 절 국대안 파동과 초기 학생 운동(1946~1960년)

### 1) 국대안 파동의 발생

서울대학교는 학생 운동의 소용돌이 속에서 탄생했다. 1946년 7월 13일 군정청 문교부는 서울대학교 설립을 의미하는 ‘국립서울대학교설립안’ (이하 국대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국대안은 발표하자마자 학교 안팎에서 강한 반발에 직면했다. 이를 ‘국대안 파동’ 이라고 한다. 2장 1절에서 언급했듯이 재경학생행동동일촉성회(이하 학통) 소속 학생들은 7월 22일 국대안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8월부터 각 학교별로 국대안반대 투쟁위원회를 조직하였다. 통합 당사자인 경성공업전문학교, 경성대학 의학부 학생들도 잇달아 반대 성명을 내놓았다. 교수들도 국대안에 반대했다. 7월 18일 전문대학교수 단연합회는 국대안 불합작(不合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전문대학교수연합회를 비롯하여 조선과학자동맹과 조선교육자협회도 국대안 반대를 선언했다. 국대안에 반대하는 학생들과 교수들은 1946년 7월 31일 ‘전국 교육자 대회’ 를 개최하고 ‘국립서울대안반대 공동대책위원회’ 를 출범시켰다.

당시 국대안 반대 이유는 7월 22일 학통 성명에서 잘 드러난다. 학통은 국대안을 “학원의 관료화”, “군정의 학원 간섭”, “각 단과대학의 자주성 박탈 조치”이며, 학원의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말살하려는 기도라고 비판하였다. 즉 국대안 반대는 대학 자치 문제와 관련이 있었다. 대학 자치 문제와 관련하여 국대안이 안고 있던 문제점으로는 첫째 “관선 이사회”가 대학을 운영하는 점, 둘째 총장, 교무처장, 학생처장과 관선 이사 절반이 미국인이라는 점, 셋째 이사회 강화로 교수회와 학생회가 약해진 점 등이었다. 이 중 관선 이사회가 대학을 운영한 것은 국대안 파동의 핵심 쟁점이었다. 관선 이사회가 대학 운영의 실권을 장악하고 교수 임면을 임의로 하여 학원 자유와 자치를 침해할 수 있었다. 반면 문교부 부장 유억겸이나 차장 오천석은 종합 대학교가 이미 세계 각국에서 공인한 제도라는 점을 근거로 국대안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서울대생들이 등록을 시작한 9월부터 국대안 반대 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먼저 9월 5일 이공학부 교직원 전원(38명)은 신설 학교에 봉직할 의사가 없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학생들 또한 적극적으로 저항하였다. 경성대학 의학부 학생들은 학생대회를 열고 학원 관료화와 비민주화 등을 지적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제학부 학생

대회, 5개 전문학교 학생회, 법과대학학생회, 공과대학 학생 대회도 국대안 반대를 결정했다. 국대안을 반대하는 학생들은 학원 자유와 민주화를 주장하며 조직적으로 등록을 거부했다.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학교 당국은 1946년 9월 11~18일 등록을 실시하였다. 전체 취학 예정 학생 8천2백여 명 중 미등록자만 3천여 명이었다. 학생 등록에 이어 각 단과대학이 개교했다. 9월 18일 8개 단과대학이 개교하였고, 10월 10일에는 상과대학이, 14일에는 의과대학이 각각 개교하였다. 등록과 개교 일정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국대안을 반대하는 학생들은 각종 집회와 시위, 동맹 휴업 등을 계속했지만 이를 크게 확산시키지는 못했다.

1946년 11월 22일 좌익계 민주주의민족전선(이하 민전)이 국대안 파동과 관련하여 4개항의 해결책을 발표하였다. 내용은, 첫째 관료 독재적인 이사회를 철폐할 것, 둘째 교수 및 학생 자치를 승인할 것, 셋째 미국인 총장과 처장 등은 사임하고 조선인을 선거로 임명할 것, 넷째 현 조선인 문교부 책임자는 인책 사직할 것 등이었다. 민전 성명 발표 이후 한동안 잠잠하던 국대안 반대 운동이 다시 거세게 일어났다. 12월 9일 문리과대학 학생들이 민전과 비슷한 내용의 요구를 하면서 동맹 휴학에 들어갔고, 곧이어 법과대학과 상과대학도 동맹 휴학을 했다. 결국 군정청은 12월 18일 문리과대학, 법과대학, 상과대학에 휴교령을 내렸다.

군정청은 1947년 2월 3일 개교를 맞이하여 만약 학생 전부가 등교하지 않으면 미등교 학생들을 전원 퇴학시키고 9월 신입생 모집 때까지 학교를 폐교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학생들은 군정청의 국대안 강행에 다시 동맹 휴학으로 대항했다. 문리과대학, 법과대학, 상과대학, 문리과대학예과, 공과대학 등 5개 단과대학으로 구성된 5대학공동대책위원회는 2월 3일 성명을 발표하고 일제히 동맹 휴학에 들어갔다. 이 성명에서 학생들은 군정청의 국대안 강행을 “파쇼적 반민주적 조치”와 “식민지 교육 정책”으로 규정하고 요구 조건을 관철할 때까지 “무자비하게 투쟁하기로 결의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공과대학 교수 9명 등 각 단과대학 교수들도 국대안에 반대하며 사임하였다. 학동도 5개 단과대학의 동맹 휴학을 지지하며 연대 투쟁에 나섰다. 서울대생 동맹 휴학에 학동이 가세하면서 동맹 휴학은 서울대를 넘어 서울과 지방 중등학교까지 확산되었다. 2월 4일에는 사범대학, 약학대학, 경북중학교가, 5일에는 의과대학, 의과대학예과, 치과대학, 예술대학이 동맹 휴학했다. 6일에는 연희대학교, 휘문중학교, 중동중학교, 경기공업학교 등이, 7일에는 농과대학, 동국대학, 한성중학교, 동성중학교, 배재중학교 등이 동맹 휴학했다. 이 시기 동맹 휴학에 참여한 학생 수는 57개교 4만여 명

정도였다. 상과대학, 법과대학, 사범대학 교수들도 사임과 불협작(不合作) 성명을 계속했다.

많은 학생이 동맹 휴학에 참여하였지만 모두가 참여한 것은 아니었다. 건설학생회 소속 학생들은 1947년 2월 9일 동맹 휴학을 비판하며 학업을 계속하자고 주장했다. 그들은 대신 국립대학교 행정을 조선인에게 이양하고, 3대 단과대학에 내린 휴교령을 철회하고, 교수진과 학교 설비를 확충할 것을 군정청에 요구했다. 전국학련 역시 2월 11일 맹휴반대투쟁위원회를 조직하고 동맹 휴학 배후에 소련과 남로당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1947년 2월 중순 이후 서울대 교수와 일부 지식인들이 군정청에 국대안 파동 해결을 위한 건의서를 제출하였다. 9개 단과대학 학장들은 러취(Lerche, A. L.) 군정 장관과 국대안 파동 해결책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노력에 따라 전국적으로 확산되던 동맹 휴학이 진정될 기미를 보였다. 마침내 3월 5일 동맹 휴학 중인 학생들은 국대안의 폐지가 아닌 시정을 요구하면서 동맹 휴학을 중지하고 등교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군정청도 일부 후퇴하여 관선 이사회를 폐지하고 9개 단과대학을 대표하는 한국인 이사 9명으로 이사회를 구성하며 한국인 총장을 임명하기로 하였다. 남조선과도입법회의(南朝鮮過渡立法議會)는 국대안 수정안을 1947년 3월 통과시켰다. 개정안 수정안에 따라 5월 26일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하였다. 새로운 이사회는 6월 13일 등록 거부와 동맹 휴학으로 제적된 학생들을 모두 복교시키기로 결정했다. 당시 제적당한 학생들은 9개 단과대학 8,040여명 학생 가운데 4,956명 이었고, 그중 약 3,200여 명이 8월에 복교하였다. 이로써 1년 가까이 지속된 국대안 파동이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제적당한 모든 학생이 복교한 것은 아니었다. “무조건” 복교를 결정했음에도 실제로는 학교 당국의 복교 “허가”가 있어야 했다. 허가 과정에서 복교를 신청한 학생들 가운데 8백여 명이 학교 당국의 불허 방침으로 복교하지 못했다. 결국 복교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들까지 포함하여 1천5백 명 이상이 학교를 떠났다. 300명이 넘는 교수도 파면되거나 사임함으로써 학교를 떠났다. 남은 교수는 140여 명에 불과했다. 좌익 계열 학생과 교수가 신생 서울대학교에서 축출되었고 이는 학내에 극단적인 반공 이데올로기를 강화시켰다. 서울대학교 학생 운동은 이러한 극단적 반공 이데올로기 속에서 크게 위축되었다.



## 2) 학생 이념 서클의 등장

국대안 파동을 거치면서 많은 좌익 계열 학생과 교수가 학교를 떠났다. 또한 1948년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과 1950년 한국전쟁 발발로 사회 전반에 반공 이데올로기가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학생들 역시 반공 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그러나 노골화하는 이승만 정권의 횡포로 인해 학생들 사이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점차 커졌다.

1952년 5월 임시 수도 부산에서 이승만 정권이 대통령 연임을 위해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의원들을 체포하여 공산당으로 처벌하는 ‘부산 정치 파동’이 발생하였다. 부산 정치 파동 결과, 국회는 이승만의 요구를 수용하여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한 이른바 ‘발췌 개헌’을 단행하였다. 이러한 민주주의 파괴를 목도한 학생들은 부산에서 그 해 6월 16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선언 대회를 열었다. 문리과대학 정치학과 4학년 학생들이 주동한 이날 집회에 학생 1백여 명이 모였다. 이들은 “계엄 해제, 국회의원 석방”, “반공, 반파쇼, 민주” 등을 구호로 외치면서 성명서를 낭독하고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이 사건으로 주동자 박대완, 김유근, 이문홍 등이 지명 수배 후 체포되어 부산 지구 계엄 군법 회의에 회부되어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부산 정치 파동 직후 학생들의 저항은 일시적인 것이었다.

이승만 정권의 횡포가 있었지만 1950년대 학생들은 직접 저항하지 못했다. 이는 일차적으로 민주주의보다 반공이 우선이던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었지만, 아직 운동 주체로서 성숙하지 못한 학생 역량 때문이기도 했다. 하지만 1950년대 후반 이후 각 단과대학이나 학과에서 그 동안 금기시하던 이념 문제를 연구하는 학생 서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당시 학생 이념 서클의 지적인 관심은 민주 사회주의, 비판적 자유주의, 민족주의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근대화론이나 후진국 발전론 등이 논의의 주류였고, 제3세계 지도자 수카르노, 티토, 나세르, 카스트로 등의 삶과 제3세계 민족 해방 투쟁에 대해 관심이 높았다. 민족주의 역사를 정리한 최문환의 『민족주의의 전개 과정』은 그때부터 1970년대 초까지 필독서였다. 그 밖에 해방 후 전석답이 번역한 『자본론』 1, 2권이나 일본에서 간행한 영국과 독일의 사회 민주주의 이론서들도 헌책방에서 구해 읽었다. 회원은 주로 선배들이 후배들 중에서 ‘의식’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이나 고등학교 동창 등 연줄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서 확보했다. 최소한의 다양성도 허용하지 않던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활동은 음성적일 수밖에 없었다.

1950년대 후반 학생 이념 서클 가운데 대표적인 조직은 정치학과의 신진회(新進會)와 법과대학의 신조회(新潮會)였다. 신진회는 1956년 말 정치학과 학생들이 민병태 교수를 지도 교수로 하여 조직하였다. 김지주, 하대돈, 유한열, 김형열, 서정균 등이 초기 중심 학생이었고, 특히 대구 경북 출신 학생들이 많았다. 회원 5명의 추천을 받으면 가입할 수 있었으며 정기적인 토론회 외에 이동화 등 당시 진보 인사를 초빙하여 강연을 듣기도 했다. 신진회는 1958년 1월 ‘유근일 필화(筆禍) 사건’으로 일단 해체되었다. 1957년 12월 신진회 회원이었던 유근일이 문리과대학 신문인 『우리의 구상』에 “민주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글을 실었다가 몇몇 구절이 문제가 되어 체포되었다. 이 필화 사건으로 신진회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신진회 소속 학생들이 함께 처벌받았다. 결국 신진회는 1958년 1월 동대문 경찰서 사찰과 형사들의 감시 속에서 공식 해산식을 하였다. 그러나 1958년 10월경 학생들은 신진회 재건을 위한 모임을 갖고 재건된 신진회의 이름을 ‘후진사회연구회’로 변경하였다. 이후 후진사회연구회는 후진국의 경제 발전 문제, 민주주의 정착 문제, 민족 통일 문제 등을 논의했는데, 민주 사회주의와 분단 극복이 논의의 가장 중요한 화두였다. 후진사회연구회 회원들은 이후 1960년 4·19 혁명을 주도적으로 이끌었으며, 이승만 정권이 무너진 이후에는 민족통일연맹(이하 민통련)을 조직하여 남북 학생 회담과 같은 통일 운동을 추진하였다.

신조회는 남재희 등 법과대학 학생 중심으로 1956년에 조직하였다. 1957년 12월 유근일 필화 사건 이후 거의 활동을 중지했다가 1958년 4월 21일 ‘사회법학회’라는 명칭으로 다시 발족하였다. 사회법학회는 학회의 목적을 “노동법, 경제법, 사회 정책학을 학술적으로 연구하여 지식을 넓히며 학회 활동을 통한 교양을 증진”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창립 당시 회장은 최상징이 맡았고, 김치선 교수가 지도 교수를 맡았다. 사회법학회는 창립 이후 연구 발표회를 활발하게 개최하였다. 발표 내용은 “경제적 기본권에 관한 제 문제”, “농지 개혁 문제”, “수정 자본주의”, “노동조합 조직과 활동”과 그 외 한국 노동 운동 문제나 사회 보장 제도에 관한 것이었다. 사회법학회는 이러한 연구 발표회 외에 노동자 실태 조사 등 외부 활동도 진행하였다. 1958년 9월 10~11일 양일 간 인천부 두자유노련의 ‘십장 제도’ 실태에 관해 현지 조사를 하였으며, 10월 29~30일에는 회원 4명이 11차 노총 대회 초청으로 대회를 참관하고 부산 부두 노동자 실태를 조사하였다. 또한 1959년 영월 탄광을 답사했으며, 1960년 대구 제일모직과 미8군 노무자들을 방문하였다. 그러나 노동 현장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 자체가 불온시되어 학교 당국과 사법 당국의 주목을 받고 결국 보고서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 밖에도 사회학과를 중심으로 한 ‘농촌사회연구회’가 1958년 이후 비공개 활동을 했다. 이 서클은 4·19 혁명 이후 ‘후진사회문제연구회’로 확대 개편하였다. 상과대학의 ‘경우회’는 1950년대 중반에 결성한 서클로 다른 학교 경제학과 학생들과 정기 학술 행사 등을 개최하였다. 경우회는 1968년 통혁당 사건 이후 ‘이론경제학연구회’로 이름을 바꾸기까지 상과대학을 대표하는 이념 서클이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학생 이념 서클 조직이 ‘혁신정당 운동’과 맞물려 만들어졌다. 1956년 10월에 창당한 진보당은 당내 학생 비밀 조직으로 ‘여명회’를 조직하였다. 문리과대학에서도 김주태를 중심으로 여명회 조직을 시도했으나, 서울대 안에 여명회가 어느 정도 조직되었는지는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다.

1950년대 후반 학생 이념 서클의 등장은 국대안 파동 이후 이념적으로 경직되었던 학내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었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변화는 해방 직후 다양하게 분출하던 지성계의 흐름이 극단적인 반공주의 속에서도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이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나 변화의 더 큰 이유는 이승만 정권의 부패와 독재가 심해지면서 학생들이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점을 인식했기 때문이었다. 학생들은 새로운 사회를 희망하며 개혁을 모색하였고 이론적인 대안을 마련하려 했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은 1960년 4·19 혁명과 이후 학생 운동으로 폭발하였다.

### 3) 유근일 필화 사건과 이강석 편입 반대 운동

1950년대 후반 등장한 학생 이념 서클들은 국대안 파동 이후 사라진 학생 운동의 기반을 다시 마련하였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학생 운동을 전개하지는 못했다. 그만큼 학생들의 운동역량은 여전히 미성숙했던 반면 극단적 반공주의를 앞세운 이승만 정권의 억압은 강했다. 그러나 본격적인 학생 운동을 전개하기 이전에도 학생들과 관련한 정치적 사건이 몇 차례 발생하였다. 그중 대표적인 사례가 1957년에 발생한 유근일 필화 사건과 이강석 편입 반대 운동이다.

1957년 12월 9일 문리과대학 ‘신문연구회’에서 발간하는 신문 『우리의 구상』에 정치학과 유근일이 ‘모색’이라는 글을 실었다. 이 글에서 유근일은 한국 사회 성격을 분석하고, 소수 지배층과 광범위한 대중의 대립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민주 사회주의를 주장했다. 그런데 이 글 속에서 언급한 “새로운 형태의 조국”과 “무산대중의 단결”이라는 말

이 파문을 일으켰다. 특히 이 글의 부제(副題)가 “무산대중을 위한 체제로의 지향”이었기 때문에 파문은 더욱 커졌다. 이 글은 비평이나 연구 논문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단정되었다. 문리과대학은 이 신문을 회수하고 편집 학생들을 정학 처분하였다. 신문연구회는 해산되었고 『우리의 구상』은 폐간되었다. 학교 당국은 유근일을 퇴학시키고 경찰은 유근일을 구속하였다. 문교부는 이 글이 대학 내 좌익계 교수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필화 사건 발생 후 문리과대학에 “불온” 벽보가 붙고 “빠리”가 살포되었으며, 유근일 필화 사건의 배후가 북한 간첩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일부 신문사에 유근일과 신진회 회원들이 함께 「적기가(赤旗歌)를 불렀다는 제보가 들어오기도 했다. 언론은 “북괴 간첩 접선”, “신진회는 비밀 결사”, “좌경·용공”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이 사건을 크게 부각시켰다. 심지어 국회에서까지 이 사건이 문제가 되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유근일의 글과 불온 벽보·빠리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유근일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과 2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신진회는 국가를 변란(變亂)하려는 단체로 인정할 수 없으며 문제의 글도 민주 사회주의에 기초를 둔 순수 학술 연구에 불과하다는 판결이었다. 훗날 유근일도 이 글의 부제는 자신이 아닌 학생 편집 기자가 임의로 붙인 것이었으며 자신과 편집 기자의 미숙으로 글 내용이 잘못 전달되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극단적인 반공주의가 지배하던 당시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학생들과 진보적 지식인들도 많은 관심을 가졌다. 진상이 드러나자 이 사건에 대한 학교와 정부의 과잉 조치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유 문제가 공론에 부쳐졌다. 유근일 필화 사건은 초기 학생 운동의 이념적 지향과 당시 사회의 분위기를 잘 보여 준다.

이강석 편입 반대 운동 역시 1957년에 일어났다. 이강석은 당시 국회의장 이기붕의 아들이었는데 1957년 3월 이승만 대통령의 양자가 되었다. 이강석이 이승만의 양자가 되자마자 그를 법과대학에 편입학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에 4월 9일 오전 남재희, 이강혁, 김종호 등 법과대학 1·2학년생 약 200여 명이 학생 총회를 개최하였다. 학생 총회에서 법대생들은 이강석의 편입학을 취소할 것을 학교 당국에 요구하였다. 그러나 9일 오후 학장회의는 이강석의 편입학을 기정사실화하였다. 이에 반발한 법대생들은 10일부터 동맹 휴학에 들어갔다. 학교 당국은 10일 오전 교수회를 소집하여 대책을 논의하였으나, 기정 방침을 변경하지 않을 것이며 등교 권유로 사태를 수습하겠다는 막연한 결론만 내렸다. 법대생들의 동맹 휴학에 대해 당시 문교부 장관은 “애국지사의 양자를 ‘스페셜 케이스’로 입학시켰다고 해서 무엇이 잘못인가”라고 응수했다.

이후 학교 당국은 학생들과 타협을 모색했다. 그 결과 이강석의 편입학을 학생들이 양해하고, 학교 당국은 앞으로 특별 입학을 인정하지 않고 동맹 휴학에 참여한 학생들을 처벌하지 않는다는 선에서 타협을 했다. 13일에 열린 법과대학 학생 총회에서 이 타협안에 대한 표결을 했으나 부결되었다. 이에 책임을 지고 학도호국단 간부 전원이 사퇴한 후 타협안은 약간의 수정을 거쳐 박수로 가결되었다. 끝까지 타협안에 반대하던 학생들은 가결 직전 모두 퇴장하였다. 우여곡절 끝에 타협안이 통과된 후 학생들은 15일부터 동맹 휴학을 풀고 정상적으로 등교하였다. 그러나 이강석의 편입학을 반대하는 학생은 여전히 많았고 결국 이강석은 자진해서 학교를 떠났다. 법대생들의 이강석 편입 반대 운동은 성공하였다. 이강석 편입 반대 운동은 단순히 학생 한 명을 배척한 사건이 아니었다. 학생들이 당시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던 권력과 지위의 남용을 비판하고 학내에서 민주적 의견 수렴을 요구한 사건이었다.

물론 유근일 필화 사건이나 이강석 편입 반대 운동을 본격적인 학생 운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두 사건은 모두 1950년대 후반 학생들의 비판 의식이 점차 성장하고 있었음을 잘 보여 준다. 이렇게 성장한 비판 의식은 학생들이 1960년 4·19 혁명과 이후 학생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 제 2 절 ‘선도적’ 학생 운동의 전개(1960~1979년)

### 1) 4·19 혁명과 이승만 정권의 붕괴

1950년대 이승만 정권은 극단적 반공주의를 앞세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독재를 계속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 사회의 모순은 심해지고 민심은 이승만 정권에 등을 돌렸다. 이승만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은 이미 1956년 제3대 정·부통령 선거에서 드러났다. 진보당 대통령 후보 조봉암의 선전과 민주당 부통령 후보 장면의 당선은 이승만 정권을 위협하기에 충분했다. 이러한 위협에 맞서 이승만 정권은 더 폭력적인 수단으로 정권을 지키려 했다. 1958년 1월 조봉암과 진보당 간부들을 간첩 혐의로 체포하고 1959년 7월 조봉암을 사형시켰다. 1958년 12월에는 국가보안법과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야당과 언론을 강하게 통제했다. 그리고 1960년 3월 15일 실시한 제4대 정·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 정권은 이승만과 이기붕을 당선케 하려고 ‘4할 사전 투표’, ‘3인조·5인조 공개 투표’, ‘야당 참관인 축출’ 등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부정을 자행했다.

이승만 정권의 노골적인 민주주의 파괴 앞에서 그 동안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던 학생들이 저항하기 시작했다. 먼저 움직인 학생들은 대구 지역 고등학생들이었다. 2월 28일 대구에서 야당의 선거 유세가 있자 교육 당국은 학생들의 유세 참가를 저지하려고 일요일인데도 학생들의 등교를 지시했다. 이에 대구 지역 고등학생들은 ‘학원의 자유’, ‘학생들의 정치 도구화 반대’ 등을 외치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3월 15일 선거 당일에도 마산 지역 학생들은 시민들과 함께 부정 선거를 강력하게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이후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던 학생 저항은 3월 15일 마산 시위에서 실종된 고등학교 입시생 김주열 시신이 눈에 최루탄이 박힌 처참한 모습으로 4월 11일 마산 앞바다에서 발견된 후 전국적으로 퍼져 나갔다.

3월 방학을 마치고 4월 개강한 서울대생들도 ‘3·15 부정 선거’를 규탄하기 위해 움직였다. 김주열 시신이 발견된 직후 4월 15일 정치학과 3학년 학생들은 부정 선거를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를 결의하고 4월 21일에 시위를 벌이기로 결정하였다. 주로 1950년대 후반 후진사회연구회(신진회의 후신)에서 활동하던 항쟁 주도 학생들은, 각 단과대학은 물론 고려대학교, 한양대학교 등과도 사전 연락을 취해 함께 행동하기로 했다. 학생들은 정치학과 합동 연구실에서 격문 4천 매와 구호 전단 4천 매를 프린트하고, 플래카드 8장을 준비했다. 준비한 구호는 “데모가 이적이냐, 폭정이 이적이냐”, “대통령은 현실을 직시하라.”, “대한민국 생명선은 대법원에 달려있다.”, “민주주의 바로잡아 공산주의 타도하자.”, “이놈 저놈 다 글렀다. 국민은 통곡한다.” 등이었다.

그런데 4월 18일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먼저 시위를 하다가 정치 깡패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항쟁 주도 학생들은 4월 21일로 예정한 대규모 시위를 19일로 이틀 앞당겼다. 1960년 4월 19일 전국 각지의 학생이 부정 선거를 규탄하며 일제히 대규모 항쟁을 개시하였다. 서울대생들은 항쟁의 최선두에 섰다. 19일 오전 8시 50분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게시판에 격문이 나붙었다. 문리과대학과 이웃한 법과대학, 미술대학, 의과대학 등 각 단과대학 게시판에도 똑같은 격문이 일제히 나붙었다.

여기 대학의 양심은 증언한다. 우리는 보다 안타까이 조국을 사랑하기에 보다 조국의 운명을 염려한다. 우리는 공산당과의 투쟁에서 피를 흘려온 것처럼 사이비 민주주의 독재를 거부한다.

조국에의 사랑과 염원이 맹목적 분격에 흐를까, 우리는 얼마나 참아왔는가.

보라! 갖가지의 부정과 사회악이 민족적 정기의 심판을 받을 때는 왔다. 이제 우리는 대학의 양심으로 일어나노니 총칼로 저지 말라. 우리는 살아 있다. 동포의 무참한 살상 앞에 안일만을 탐할쏘냐! 한숨만 실쏘냐! 학도여, 우리 모두 정의를 위하여 총궐기하자.

교정에 있던 학생들이 격문에 시선을 쏟고 있을 때, 종로5가 쪽에서 고등학생 시위대가 함성을 지르며 동승동 쪽으로 몰려왔다. 대광고등학교 학생 1천여 명이 경찰의 저지선에 부딪히자 종로5가에서 혜화동 방면으로 방향을 바꿨던 것이다. 고교생들의 함성에 자극받은 문리과대학 학생들은 마로니에 앞 광장으로 모여들었다. 9시 10분 항쟁 주도 학생들은 미리 준비한 선언문, 격문, 구호 등을 학생들에게 배부하였다. 9시 20분 드디어 문리대생 2백여 명이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거리에 나섰다. 곧이어 법과대학, 미술대학, 약학대학, 음악대학, 수의과대학, 치과대학 학생들과 나머지 문리대생들이 합류하였다. 모두 3천여 명의 시위대는 경찰 저지선을 뚫고 태평로에 있던 국회의사당을 향해 달려갔다. 거의 같은 시각 문리과대학 옆 동성고등학교에서도 학생 1천여 명이 시위에 나섰고, 9시 30분에는 사범대생 1천여 명, 상대생 2천여 명이 각각 교문을 나섰다. 특히 의과대학, 약학대학 학생 6백여 명은 흰 가운을 입고 부상자들을 치료하며 시위에 나섰다.

10시 30분 경찰 저지선을 뚫고 문리과대학·법과대학·미술대학 학생들이 먼저 국회의사당 앞에 도착했다. 20분 뒤에는 사범대학 상과대학 학생들이 도착했다. 국회의사당에 도착한 학생들은 연좌 시위를 벌였고 학생 대표들은 연단에 올라 열변을 토했다. 11시 40분 국회의사당에 도착한 동국대학 시위대가 이승만 대통령이 있는 경무대로 방향을 틀자, 그 바로 뒤로 사범대학을 중심으로 한 서울대생들과 성균관대학교, 동성고등학교 학생들이 따라나섰다. 오후 1시경 대다수 대학생과 고등학생이 시위에 나서고 시민들까지 적극적으로 합류하여 서울 시내의 시위 군중이 10만 명을 훨씬 넘어섰다. 경무대로 향한 시위대도 경찰 저지선을 하나씩 돌파하며 점차 경무대에 접근하였다.

오후 1시 40분, 탈취한 소방차를 앞세운 시위대와 경찰 최후 저지선의 간격이 10여 미터로 줄었을 때 경찰의 총구가 일제히 불을 뿜었다. 경찰의 무차별 총격에 시위대 행렬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잠시 후 시위대는 동국대생들을 선두로 대열을 정비하고 다시 경무대 앞으로 나아갔다. 경찰은 거듭 무차별 총격을 가했다. 이후 동성고생, 연세대생 등이 시위에 합류하였고 경찰 발포 역시 계속 이어졌다. 경찰은 경무대뿐만 아니라 중

양청 앞, 서대문 이기봉 집, 태평로 파출소, 을지로 내무부, 동대문 경찰서 등에서도 발포하였다. 시위대도 이승만 독재의 상징이었던 서울신문사와 반공회관 등을 불태웠다. 4월 19일 시위는 비상계엄령을 발동하고 군대가 서울에 주둔하면서 일단 진정되었지만 이날 서울에서 100명이 넘는 학생들과 시민들이 경찰의 발포로 사망하였다. 서울대학교에서도 문리과대학 김치호, 미술대학 고순자, 법과대학 박동훈, 사범대학 유재식, 손중근, 상과대학 안승준 등 6명이 희생당했다.

계엄령 발동 이후 정부는 전국 각급 학교에 임시휴교령을 내렸고 집회를 일체 금지했다. 하지만 4월 25일 이번에는 전국 각 대학교 교수 258명이 서울대 교수회관에 모여 문리과대학 이희승 교수 등이 작성한 시국 선언문을 채택한 후 “학생들의 피에 보답하라.”라고 쓴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에 나섰다. 교수들이 시위에 나서자 학생들 역시 하나 둘씩 스승의 행렬에 동참했고 그 인원은 1만 명을 헤아렸다. 교수단은 국회의사당에 도착하여 시국 선언문을 다시 한 번 낭독하고 만세 삼창과 애국가를 부른 뒤 해산하였다. 이날 교수단은 시국 선언문을 통해 ‘이승만 하야’를 분명하게 요구했다. 4월 19일 대규모 시위 당시에도 간간이 이승만 하야 구호가 나오기는 했지만, 그보다는 부정 선거 규탄과 재선거 실시가 주된 구호였다. 하지만 교수단에서 ‘이승만 하야’를 분명하게 요구하면서 이승만 하야는 항쟁의 가장 큰 목표가 되었다. 다음날인 4월 26일 아침부터 학생들과 시민들은 다시 결집하였다. 10만으로 불어난 시위대는 세종로에서 중앙청까지 도로를 짝 메우고 이승만의 하야를 요구했다. 결국 이날 10시 30분 이승만 대통령은 학생 대표들과 면담한 후 국민 요구에 굴복하여 하야성명을 발표했다. 12년 이승만 독재가 마침내 막을 내렸다.

학생들은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독재 정권을 스스로의 힘으로 무너뜨렸다. 학생들이 4월 19일 전개한 항쟁은 이로 인해 4·19 혁명이 되었다. 4·19 혁명은 1964년 6·3 항쟁, 1980년 5·18 광주 항쟁, 1987년 6·10 항쟁 등으로 이어지는 한국 민주화 운동의 시발점이다. 또한 4·19 혁명은 학생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는 계기였다. 물론 당시 학생들은 조직적이지 못했고 구체적인 지향도 뚜렷하지 않았다. 학생보다 하층 노동자나 무직자 등 기층민중의 희생이 더 많았다. 하지만 학생들은 4·19 혁명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결국 독재 정권을 무너뜨렸다. 스스로의 힘으로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경험을 통해 학생들은 역사의 주체로 등장했다. 이 경험은 이후 학생 운동이 발전하는 원동력이었다.



## 2) 4·19 혁명 직후 계몽 운동과 통일 운동

4·19 혁명으로 이승만 독재를 종식시킨 학생들은 이후 본격적으로 학생 운동을 전개하였다. 학교로 돌아간 학생들은 먼저 학원 민주화 운동을 벌였다. 우선 학생들은 어용적인 학도호국단을 해체하고 명실상부한 학생 자치 조직인 학생회를 건설하였다. 다음으로 학생들은 어용 교수들의 축출을 요구했다. 상과대학의 경우 1960년 5월 4일 학생 총회를 개최하고 어용 교수 축출을 요구했다. 어용 교수 축출 문제는 교수들 사이의 파벌 대립까지 겹쳐 매우 혼란하고 복잡한 양상을 띠었다. 미술대학과 문리과대학에서도 학장 배척 운동이 일어났다.

학원 민주화 운동 이후 학생들은 다시 학교 밖으로 눈을 돌렸다. 1960년 6월 10일 서울대 총학생회는 국민 새생활 운동, 국민 계몽 운동을 벌이기로 결의하였다. 또한 여학생회는 여성 신생활 운동을 문리과대학은 “농촌으로 가기” 운동을 벌이기로 결의하였다. 이후 단과대학별로 국민 계몽 운동 조직을 결성하였고, 7월 6일에는 서울대학교 국민계몽대가 결대식을 갖고 “새나라 새터에 새살림”이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시가행진을 했다. 국민계몽대는 여름 방학을 맞이하여 7월 8일부터 서울과 부산 등 도시에 새생활 운동반을, 농촌에 국민계몽반을 각각 파견하였다.

서울에서 활동한 새생활운동반은 “망국 사치품 건국 국산품”, “한 개비 양담배에 불타는 우리 조국”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다방, 카바레를 찾아다니며 양담배, 커피 배격과 국산품 애용을 호소했다. 이들은 회수한 양담배 2천여 갑을 세종로에서 소각하고 공휴일에 사적인 용무로 유흥지에 나온 공무 차량을 적발하였다. 부산, 대구, 마산 등의 지방 도시에서도 동일한 활동을 했다. 이는 자립 경제를 확립하려고 한 활동이었다. 각 농촌에 파견된 국민계몽반은 농민을 계몽하고 4·19 혁명의 민주 정신을 농민들에게 보급하는 활동을 했다. 특히 7월 29일에 실시할 총선거를 공명하게 치루기 위해 농민들에게 선거의 의미와 선출 방법 등을 계몽하였다.

여름 방학 종료와 함께 농촌 계몽 운동은 일단 중단되었다. 그러나 새생활 운동은 2학기 개강 이후에도 서울에서 계속 벌였다. 9월 22일 3백여 국민계몽대 학생들은 국회의사당 앞에 집결하여 ‘가넘버’ 차를 적발했다. 학생들은 특권층들이 가넘버 차를 불법으로 운용하여 탈세를 범하고 군수품을 도용한다고 비판하면서, 새생활 운동 입법화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한편 서울대 총학생회는 새생활 운동을 전체 학생 운동으로 확산하기 위해 8월 23일 시내 중고등학교 학생 대표와 좌담회를 열었다. 그리고 9월 24일 58

개 고등학교 6,700명이 모여 국민계몽대 지휘 아래 새생활 운동을 함께 벌일 것을 결의했다. 사범대학에서도 전국 사범대생 계몽연맹을 조직하였다. 국민계몽대는 1960년 겨울 방학에도 도시에 새생활운동반, 농촌에 농촌계몽반을 파견하였다. 서울에서 활동한 새생활운동반은 크리스마스(新正)에 허례허식 일소를 위한 운동을 벌였다.

이러한 계몽 운동은 노력만큼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구조화한 사회적 모순을 관념적인 계몽 운동만으로 해결할 수 없었다. 학생들은 1960년 7·29 총선에서 참패한 혁신 세력과 4·19 혁명을 완수할 수 없는 민주당 정권을 지켜보면서 계몽 운동의 한계를 깨닫고 분단 현실을 자각하기 시작했다. 4·19 혁명을 주도적으로 계획하던 신진회 등 이념 서클 출신 학생들은 국내외 이슈로 부상하고 있던 통일 문제에 큰 관심을 가졌다. 이들은 1960년 11월 18일 서울대학교 '민족통일연맹'(이하 민통련)을 결성하였다. 서울대학교에서 민통련을 결성한 이후 다른 대학교도 민통련을 속속 결성하였다. 민통련은 당시 한국 사회가 지닌 여러 문제들의 근본 원인을 분단에서 찾고 통일 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통일 운동은 학생들을 4·19 혁명의 대의 안으로 묶어 주는 구심점 역할을 했다.

민통련이 주도한 첫 번째 학생 운동은 1961년 2월 '한미 경제 협정 반대 운동'이었다. 1961년 2월 8일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한미 경제 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은 미국에게 한국 정부의 경제 운용에 대한 강력한 통제권을 부여하였다. 이에 2월 12일 서울대학교를 포함한 7개 대학교 민통련은 서울대학교 국민계몽대 등과 제휴하여 '한미 경제협정반대 전국학생공동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14일 성토 대회를 열었다. 단지 내정 간섭 문제에 국한하여 싸우던 대다수 사람들과는 달리, 민통련 학생들은 한미 경제 협정을 미국의 한국 예속화 조치로 판단하였다. 민통련 학생들은 제3세계 민족 해방론의 관점에서 한국의 분단과 빈곤에 대한 미국 책임을 질타하였다. 하지만 한미 경제 협정 반대 운동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아직 민통련의 역량과 영향력은 크지 않았다.

민통련은 1961년 3월부터 '2대 악법 반대 운동'을 전개하였다. 2대 악법이란 반공임시특별법과 데모규제법을 말한다. 한미 경제 협정 반대 운동 이후 일련의 시위에서 위기의식을 느낀 장면 정권은 반공주의를 고수하고 각종 시위를 억제하기 위해 이 두 법안을 제정하고자 했다. 각 정당과 사회 단체들은 즉각 두 법안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장면 정권의 비민주성을 비난하였다. 학생들 역시 민통련을 중심으로 악법반대전국학생투쟁위원회를 결성하였다. 학생들은 2대 악법이 통과되면 통일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

다. 2대 악법 반대 운동은 이전 한미 경제 협정 반대 운동보다도 더 큰 참여와 열기 속에서 진행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민통련은 사실상 학생 운동을 주도하는 단체로 성장했다.

1961년 4월 19일, 즉 4·19 혁명 1주년을 맞이하여 서울대생들은 민통련 주도로 4·19 제2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여기서 학생들은 독재에 대한 저항과 자유에 대한 향수만 언급하던 1년 전 선언과는 달리, 현실을 타개할 운동 방향으로 반봉건, 반외세, 반매판의 3반(反)과 민주, 통일, 민족 자주를 제시했다. 1961년 5월 3일 서울대학교 민통련은 이러한 방향에 입각하여 북한 학생들에게 남북 학생 회담을 제안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5월 5일 17개 대학교 민통련을 연합한 ‘민족통일전국학생연맹’(이하 민통전학련)이 결성 준비 회의를 갖고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이 결의문은 철저하게 제3세계 민족 해방론의 관점에서 씌었다.

서울대학교 민통련의 남북 학생 회담 제안과 전국 연합 조직인 민통전학련 결성은 분단 이후 극단적 반공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던 한국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장면 정권과 보수 진영은 학생들의 남북 학생 회담 추진을 힘으로 막으려 했다. 일반 학생들은 찬반 양론이 엇갈린 가운데 사태의 추이를 주시하였다. 하지만 민통련의 남북 학생 회담은 내부 논의와 준비를 충분히 거치지 못한 채 제안된 것이었다. 민통련은 남북 학생 회담 제안이 예상 밖의 파문을 일으키자 이를 감당하지 못하였다. 민통련 주도 학생들은 남북 학생 회담이 정치적 협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북 학생 교류를 위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하였다. 또 이 회담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회담의 가부(可否)를 투표에 부치자고 뒤늦게 제의하였다. 5월 13일 서울에서 재야 중심의 ‘민족자주통일 협의회’(이하 민자통)가 남북 학생 회담을 지지하기 위해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자, 서울대학교 민통련은 학생 운동의 순수성을 이유로 이 집회에 불참하였다. 결국 민통련 주도 학생들은 내부적으로 남북 학생 회담 제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하였고, 장면 정권 인사들과도 비공식적으로 만나 이러한 결정을 전달하였다. 민통련의 남북 학생 회담 제안은 주체의 힘과 객관적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추진한 상징적이고 관념적인 통일 운동이었다. 1961년 5·16 쿠데타 이후 군사 정권은 민통련 주도 학생들을 체포하거나 투옥하였다. 이후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 시기 내내 통일 운동은 용공(容共)으로 몰려 금기시되었다.

4·19 혁명 이후 민통련이 추진한 통일 운동은 반공주의와 같은 냉전 이데올로기를 극복하고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분단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비록 당시 학생들의 주

체적 역량 부족과 극단적 반공 이데올로기가 통일 운동을 전개하는 데 장애였지만, 이를 계기로 학생 운동의 이념적 지향은 민족주의와 민주주의로 자리 잡았다. 1964~1965년 6·3 항쟁과 한일 회담 반대 운동을 거치면서 민족주의와 민주주의라는 학생 운동의 이념적 지향은 더 분명해졌다.

### 3) 6·3 항쟁과 한일 회담 반대 운동

1961년 5·16 쿠데타로 민통련 중심의 통일 운동은 완전히 중단되었지만, 4·19 혁명 이후 고조된 민족주의는 여전히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1962년 6월 벌인 한미 행정 협정 체결 촉구 시위는 학생들의 민족주의적 정서를 잘 보여 준다. 1962년 6월 6일 고려대생들이, 6월 8일 서울대생들이 한미 행정 협정을 조속히 체결할 것을 촉구하며 5·16 쿠데타 이후 최초로 학생 시위를 벌였다. 시위의 발단은 1962년 봄 미군이 임진강 부근에서 나무꾼을 살해한 사건이었다. 사건 직후인 1962년 3월 서울대생들은 이 문제가 미군의 지위를 규정한 이른바 ‘대전 협정’의 불평등성에 기인한다고 판단하고, 대전 협정을 대체하는 한미 행정 협정을 조속하게 체결할 것을 박정희 대통령과 케네디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학생들의 요구는 군사 정권과 학교 당국이 학생들의 정치 관여를 인정하지 않아 일단 좌절했다. 하지만 5월 말 파주에서 미군 장교 등 6명이 절도 혐의로 한국 소년에게 폭행을 가해 결국 그 소년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결국 1962년 6월 8일 학생 1천여 명이 문리과대학에 모여 미군의 폭행 치사를 규탄하고 한미 행정 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촉구하였다. 학생들은 선언문 낭독 직후 학교 밖으로 나와 가두 행진을 벌이려 했으나 헌병들이 저지했다. 이 과정에서 학생 47명이 연행되었다.

한일 행정 협정 체결 촉구 시위를 주도했던 학생들은 1963년 10월 ‘민족주의비교연구회’(이하 민비연)를 결성하고 더욱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민비연은 합법적으로 학생 운동 기반을 확대하고 학생 운동의 새 방향을 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연구 발표와 세미나를 통해 민족주의와 관련한 학술적·이념적 지표를 세우자 했다. 이들은 박정희 정권의 한일 협정 체결 시도에 비판적이었다.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은 취약한 정권의 정통성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 개발에 총력을 기울였고, 이를 위해 일본 자금을 들여오려 했다. 또한 1960년대 들어와 한국과 일본의 관계 정상화를 요구하는 미국이 압력도 한층 강해졌다. 이에 박정희 정권은 조속한 한일 회담 타결을 시도했

고 최대 쟁점이었던 청구권 액수에 합의한 이후 한일 협정은 거의 타결 직전에 이르렀다.

하지만 학생들은 박정희 정권의 한일 협정 체결을 굴욕 외교라고 비난했다.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해 사과 한마디 받지 못한 채 무상 원조 3억 달러 정도로 해양 주권선인 ‘평화선’을 팔아넘기는 박정희 정권에 학생들은 분노했다. 1963년 말부터 민비연은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한일 회담 반대 시위를 준비했다. 그 결과 1964년 3월 24일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등 학생 5천여 명이 대규모 가두시위를 벌였다. 이 시위에서 문리대생들은 제2의 이완용을 자처한 정부 측 한일 협상 대표 김종필의 허수아비 인형을 화형시켰다. 이날 전국 주요 도시에서 한일 회담 반대 시위를 벌인 학생과 시민은 총 8만여 명이나 되었다. 25일과 26일에도 많은 학생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특히 26일에는 고등학생들이 시위를 주도하면서 시위 규모가 서울에서만 2만 5천 명으로 불어났다. 결국 박정희 대통령은 시위를 진정시키기 위해 1964년 3월 27일 마지막 한일 협상을 위해 일본에 머문 김종필을 급히 한국으로 소환하였다.

4월에 들어와 민비연 학생들에게 북한과 관련한 것처럼 보이는 정체 불명의 괴소포가 배달되었다. 또한 서울대학교에서는 그 동안 학생 서클로 위장한 수사 기관의 학원 사찰 기구인 YTP, 즉 청사회(靑思會)의 정체가 드러났다. 이러한 공작 정치는 박정희 정권에 대한 분노와 불신을 더욱 고조시켰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은 5월 11일 “돌격 내각”이라고 부르는 정일권 내각을 출범하면서 한일 협정 체결 의지를 분명히 하였다. 이에 비례하여 학생들의 저항 의지도 더욱 강해졌다. 5월 20일 문리과대학에 서울대학교,



그림 5-3-1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 모습

동국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건국대학교, 경희대학교 등 5개 학교 학생 4천 명이 모여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을 거행하였다.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은 민족적 민주주의를 통치 이념으로 내세웠던 박정희 정권을 직접 겨냥했다.

대회장에는 “축(祝)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이라고 쓴 만장이 펼쳐이는 가운데, 건(巾)을 쓰고 죽장(竹杖)을 잡은 네 명의 학생이 민족적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관을 메고 입장하였다. 학생들은 선언문에서 반외세, 반독재, 반매판의 민족 민주 정신을 분명히 하였고 조사(弔辭)에서 박정희 정권을 통렬하게 풍자, 비판했다. 장례식이 끝나자 학생들은 관을 앞세우고 교문을 향해 나아갔고 이화동 삼거리에서 경찰과 충돌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격렬했던 이날의 시위는 많은 연행자와 부상자를 낳았다. 이제 한일 회담 반대 운동은 단순한 회담 반대 운동에서 벗어나 반정부 운동으로 발전했다.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을 기점으로 학생과 정부의 충돌은 격해졌다. 정부는 민비연을 민통련과 관계 있는 사회주의 찬동자로 규정했다. 또 미술대학에 경찰을 투입하여 시위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학생들을 대량 검거, 구속했다. 심지어 시위 학생들을 선처한 법원에 무장 군인들이 난입하기도 하였다. 학생들도 5월 23일 법과대학 시위, 5월 25일 전국 31개 대학교 학생 대표가 모여 ‘난국 타개 학생 총궐기 대회’를 하는 등 저항을 계속하였다. 특히 문리과대학학생회는 5월 30일 ‘자유 쟁취 궐기 대회’를 열고 시위 주동 학생에 대한 징계와 정부의 반민주적 처사를 규탄한 뒤 집단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처음 20명으로 시작한 단식은 다른 단과대학 학생까지 가세하면서 6월 2일 그 수가 200명으로 증가하였다. 이 집단 단식 농성은 이전 학생 운동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새로운 투쟁 방식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6월 3일 드디어 학생들은 각 단과대학에서 성토 회의를 열고 대규모 시위에 나섰다. 오전 10시 30분 의대생 200명이 시청 앞에서 시위한 것을 비롯해, 농과대학, 상과대학, 사범대학, 음악대학, 약학대학 등 학생 2천여 명이 각양각색의 구호를 외치며 거리를 누볐다. 약대생 300명은 성토 대회 후 교문 밖으로 진출하다가 250명이 연행되었고, 치대생 300명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연좌 농성을 했는데 경찰이 강제 해산했다. 사대생 400명도 구호를 외치며 신설동 방면으로 진출했으며, 농대생들도 수원에서 170리를 도보 행군하여 서울 시위에 합류했다. 오후 4시 50분 문리대생 400여 명이 단식을 그치고 교문을 나와 종로5가로 향했고 여기에 법대생 200여 명이 합세하였다. 이날 서울대학교 뿐만 아니라 18개 대학교 1만여명의 학생들이 함께 시위에 나섰다. 구호도 “박정희 정권 하야”로 모였다. 시위대는 중앙청으로 진출한 뒤 다시 청와대 쪽으로 돌파를 시도했

다. 결국 박정희 정권은 밤 9시 40분 서울시 일원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함으로써 군대를 동원하여 대규모 시위를 진압하였다. 이날의 대규모 시위가 바로 '6·3 항쟁'이다. 박정희 정권은 6·3 항쟁의 책임을 물어 6월 7일 서울대학교 총장을 경질하였다.

계엄령 발동 이후 긴 겨울을 보낸 학생들은 1965년 4월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한일 회담 반대 운동을 벌였다. 1964년은 문리과대학이 중심이었다면, 1965년은 법과대학이 중심이었다. 1965년 4월 3일 한일 협정을 가(假)조인하자, 4월 10일 법대생 500여 명은 '매국 외교 반대 성토 대회'를 한 후 가두시위를 벌였다. 4월 13일 시위가 고려대학교와 동국대학교 등 다른 학교로 확산하였다. 이날 시위에서 동국대생 김중배가 경찰봉에 맞고 이틀 후에 사망하였다. 15일 법대생은 다시 학생 총회를 열고 매국 외교를 규탄하는 5일 간 단식 투쟁을 벌였다. 16일 상대생도 '한일 회담 반대 성토 대회'를 갖고 50명이 단식 투쟁에 들어갔다. 17일 사대생도 성토 대회를 개최했다. 긴장이 계속 고조되자 16일 법과대학의 휴교에 이어, 사범대학도 17일부터 휴교했다. 법과대학의 경우 학장 요청으로 경찰이 학내로 들어와 단식 농성 중이던 학생 39명을 모두 연행하였다. 그러나 27일 농과대학, 29일 문리과대학은 성토 대회와 시위를 계속 벌였다.

잠시 조용하던 학교는 5월 하순 다시 시위 열기에 휩싸였다. 5월 18일 법과대학, 사범대학, 문리과대학에서 한일 회담 반대 시위가 있었다. 특히 법대생들은 지난달 학교에 경찰을 투입시켜 학생들을 연행하도록 한 학장의 해명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20일 법과대학 학생들은 학생 총회를 열어 동맹 휴학을 결의하고 학원 자유 보장과 학생 사찰 금지 등을 요구했다. 학교 당국은 동맹 휴학 주동 학생을 대량 징계했다. 24일 법과대학 학생들은 학장의 사임을 요구하며 동맹 휴학에 들어갔다. 31일 학교 당국은 학생들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였다.

6월 12일 법대생들은 5월의 동맹 휴학을 마무리하고 한일 협정 반대 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14일 법대생들은 무기한 단식 투쟁을 시작했다. 단식 투쟁 열기는 다른 단과대학으로 퍼져나갔다. 19일에는 단식 중인 법과대학 학생 232명 이외에, 문리대생 63명, 상대생 320명, 사대생 20명이 추가로 단식 농성을 벌였다. 이에 학교 당국은 예전보다 20일이나 빠른 6월 21일부터 여름 방학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한일 회담의 정식 조인을 하루 앞둔 21일 서울대학교 등 시내 12개 대학교 학생과 3개 고등학교 학생 1만여 명이 가두시위를 벌였다. 그리고 22일에는 13개 대학교가 단식 농성과 함께 시위를 계속했다. 하지만 경찰의 대규모 진압 작전으로 캠퍼스를 벗어나지 못한 채 많은 학생들이 연행되었다. 학생 운동 사상 전무후무한 200시간 단식 농성도 혈서와 함께 마무리되었다.

한일 협정 조인 후 한일 회담 반대 운동은 비준 반대 운동, 비준 무효화 운동으로 이어졌다. 7월 3일 의대생 200여 명은 ‘한일 협정 비준 반대 성토 대회’를 열었다. 12일에는 서울시내 16개 대학교 교수 345명이 「한일 협정 비준 반대 선언문」을 발표했다. 8월 14일 국회가 비준안을 변칙적으로 통과시키자, 17일 법과대학 학생회는 비준안 국회 통과 무효 선언식을 갖고 18일 성토 대회를 열었다. 8월 21일 긴 방학이 끝나고 학교가 개학하자 곧바로 법과대학과 문리과대학은 각각 성토 대회를 열었다. 24일에는 11개 단과대학 학생 2,500명이 문리과대학에 모여 성토 대회를 갖고 가두시위를 벌였다. 이날은 다른 대학교 학생들을 포함하여 모두 1만여 명이 시위에 참여하였다. 25일에도 문리과대학에 1,500명이 모여 성토 대회를 가진 뒤 가두시위를 벌였다. 하지만 같은 날 고려대학교에 무장 군인이 난입한 뒤 정부는 다음날 서울 지역에 위수령을 내렸다. 27일 정부는 학원 혼란의 책임을 물어 서울대학교 총장을 다시 경질하였다. 그리고 학교 전체는 29일부터 휴교에 들어갔다. 이것으로 2년 동안 지속하던 한일 회담 반대 운동은 막을 내렸다.

1964~1965년에 걸친 한일 회담 반대 운동은 4·19 혁명보다 훨씬 조직적으로 장기간 진행했다. 처음에는 민비연을 중심으로 연계를 했지만, 뒤로 갈수록 다양한 학생 조직이 폭넓게 참여하였다. 한일 회담 반대 운동을 장기간 조직적으로 할 수 있던 것은 4·19 혁명 이후 활성화한 학생회, 학회 등 여러 학생 조직의 활동 덕분이었다. 4·19 혁명 이후 학생들 사이에 뿌리내린 민족주의와 민주주의라는 이념적 지향 역시 한일 회담 반대 운동의 원동력이었다. 한일 협정 체결을 막지는 못했지만 한일 회담 반대 운동은 학생 운동이 민족 민주 운동의 중심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는 계기였다.

#### 4) 3선 개헌 반대 운동과 교련 반대 운동

1960년대 이후 학생 운동은 민비연과 같은 학회가 중심이 되었다. 당시 학회는 대개 단과대학별로 조직되었고 회원 수는 학년별로 대략 10여 명 정도였는데 3학년 선배가 신입생을 개별 면담한 후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을 뽑았다. 세미나의 커리큘럼은 학회 성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었지만, 분단 문제, 미국의 한반도 전략과 신식민지 지배, 매판 자본 등 현실적인 문제에서 제3세계 역사, 세계사, 한국 현대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문제를 다루었다. 카(E. H. Carr)의 『역사란 무엇인가』, 황성모의 『현대사회사상사』, 최문환의 『민족주의의 전개과정』 등이 세미나용 주요 도서였다. 민비연 이후 1960



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까지 서울대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며 학생 운동을 주도 한 학회는 ‘한국사회연구회’, ‘이론경제학회’, ‘후진국사회연구회’, ‘문우회’, ‘사회법학회’ 등이 있었다. 운동 주도 학생은 학회를 통해 재생산되었고, 이들은 각 단과대학을 단위로 학생회나 학회, 서클 등에서 활동하며 학생 운동을 이끌었다.

1960년대 후반부터 박정희 정권은 박정희 대통령의 3선 연임을 위해 이를 금지하는 헌법을 개정하려 했다. 먼저 박정희 정권은 1967년 6월 8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개헌 가능 의석(재적 2/3 이상)을 확보하고자 했다. 수많은 선거 부정을 자행한 가운데 집권 공화당은 개헌 가능 의석을 획득하는 데 성공했다. 4·19 혁명 이후 선도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던 학생들은 선거 부정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선거 직후인 6월 12일 법대생들이 먼저 부정 선거 규탄 시위를 벌였다. 문리대생들도 13일 부정 선거 규탄 시위를 벌이려 했다. 이에 학교 당국은 시위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13일부터 16일까지 모든 단과 대학에 휴교령을 내렸다. 그런데도 학생들은 계속해서 부정 선거 규탄 시위를 벌였다. 휴교 기간은 무기한 늘어났고 7월 5일 조기 여름 방학을 했다. 또한 박정희 정권은 7월 동백림(동베를린) 간첩단 사건을 발표하면서 민비연을 연루시켰다. 이는 학생 운동 배후에 북한이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학생들의 6·8 부정 선거 규탄 시위를 약화시키려는 정치적 조작이었다. 8월 21일 개강 후에도 일부 문리대생들과 법대생들은 부정 선거 규탄 대회를 가졌고, 9월 10일에는 상대생 150명이 부정 선거 규탄 시위를 벌였다. 학교 당국은 시위 주동 학생들을 모두 제적했다. 주동 학생 처벌 이후 부정 선거 규탄 시위는 마무리되었다.

1971년 대통령 선거를 2년 앞둔 1969년 6월경부터 박정희 정권은 본격적으로 개헌을 추진했다. 학생들은 이에 적극적으로 저항했다. 1969년 6월 12일 서울대학교 법대생 500여 명이 학생회 주관으로 3선 개헌에 반대하는 ‘헌정 수호 학생 총회’를 열었다. 17일 문리대생 200여 명이 학생 총회를, 19일 공대생 500여 명이 성토 대회를 각각 열었다. 이후 전국 각 대학교에서 3선 개헌에 반대하는 성토 대회와 시국 선언을 연일 계속했다. 7월 1일 8천여 명, 2일 6천여 명이 거리로 나가 경찰과 충돌하였다. 3일부터 문리과대학과 법과대학은 휴교에 들어갔다. 7월 4일에는 중량교까지 진출하여 연좌 시위를 벌이다 학교로 돌아가는 600여 명의 공과대학 및 교양과정부 학생들을 경찰이 무자비하게 폭행하였다. 결국 7월 5일 문리과대학 등 7개 단과대학은 학기말 시험도 보지 못한 채 조기 방학을 했다.

폭력 진압과 조기 방학으로 학생들의 3선 개헌 반대 운동이 주춤해진 가운데 박정희

정권은 7월 8일 3선 개헌 추진을 공식화하였다. 그리고 3선 개헌을 위해 국회 표결을 시도하였다. 이에 학생들은 9월 1일 개강과 동시에 시위를 재개하였다. 이날 문리대생 300여 명은 비상 시국 선언문과 전국 대학 교수단에 보내는 메시지를 낭독한 후 “3선 개헌 결사 반대”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가두시위를 벌였다. 같은 날 법대생들은 단식 선언문을 발표하고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고 상대생들도 성토 대회와 시위를 벌였다. 이 세 단과대학은 곧바로 휴교했다. 9월 2일과 4일 교양과정부와 공과대학 학생들이 시위를 벌이자, 이 단과대학들도 휴교에 들어갔다. 8일에는 사범대학까지 휴교했다. 3선 개헌 반대 운동이 격해지면서 개헌안 국회 표결 전날인 9월 13일까지 전국에서 33개 대학교가 휴교에 들어갔다. 학교의 문이 닫힌 상태에서 9월 14일 박정희 정권은 개헌안을 여당 단독 표결로 날치기 통과시켰다. 국회를 통과한 개헌안은 10월 17일 국민 투표를 통과하였다. 학생들은 10월 23일 학교가 전면 개강할 때까지 3선 개헌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한편 1970년 11월 13일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분신한 전태일의 죽음을 계기로 학생들 사이에서 노동자와 민중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전태일 분신이 있는 지 닷새 후인 11월 18일 상대생 200여 명은 “기업가는 근로자의 인간적 삶의 기초를 보장하고 노동은 본래의 사명을 다하라.”고 결의한 후 단식 농성에 돌입하였다. 20일에는 법대생과 문리대생들이 이화여대생들과 함께 4·19 탑 앞에서 전태일의 추모식을 하고 시위를 벌였다. 학생들의 노동 조건 개선 운동이 집단화할 조짐을 보이자 학교 당국은 11월 20일부터 조기 종강에 들어갔다. 조기 종강으로 전태일 분신과 관련한 학생들의 움직임은 점차 잦아들었지만, 전태일 분신은 학생 운동과 노동 운동이 결합하는 계기가 되었다. 민족, 민주와 함께 민중이 학생 운동의 이념적 지향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1971년 박정희 정권은 장기 집권의 걸림돌인 학생들을 근본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학생들을 병영 안에 가두는 정책을 추진했다. 1월 27일 문교부는 대학 교련 교육 강화 방침을 발표했다. 대학 교련 교육은 일반 교육을 1주에 3시간씩 총 315시간 7학점(4학년 1학기까지) 이수하고, 병영 집체 교육을 총 396시간 동안 재학생 모두가 의무적으로 수강하게 하는 것이었다. 또한 이전까지 교련 교육을 담당하던 예비역 교관을 모두 현역 장교로 바꾸게 하였다. 이와 같은 ‘대학교련교육안’은 2월 23일 국무 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대학교련교육안을 정권 안보를 위한 학원 민주주의 파괴 행위로 규정하고 반대했다.

1971년 3월 2일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단은 총학생회 이름으로 “학원 대(大)민주화 운

동 지침”을 발표하고 학생의 기본적 권리를 요구하였다. 문리과대학, 법과대학, 상과대학 학생들은 교련 과목 수강 신청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정부는 서울대학교에 현역 교관단을 파견하고 3월 15일부터 교련 교육을 실시했다. 문리대생들과 법대생들은 3월 15일 각각 학생 총회를 열고 교련 수업 거부를 결의하였다. 공과대학도 3월 말 성토 대회를 열었다. 학생들의 교련 반대 운동은 점차 가두시위로 커졌다. 4월 6일 상대생 1천여 명 가두시위를 필두로 7일 법과대학, 8일 문리과대학, 9일 사대생들이 시위를 벌였다. 다른 단과대학 학생들도 교련 반대 성토 대회를 열고 교련 수업을 거부할 것을 결의하였다. 교련 반대 운동이 격해지자 4월 13일 문리과대학과 법과대학을 시작으로 거의 모든 단과대학이 휴교에 들어갔다.

휴교로 교련 교육을 잠시 중단하자 학생들은 1971년 4월 27일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명 선거 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4월 14일 서울대학교 등 전국 12개 대학교 학생이 모여 민주수호전국청년학생연맹을 결성하고 교련 반대 운동과 공명 선거 캠페인을 함께 벌이기로 결의했다. 공명 선거 캠페인은 주로 학생들이 선거 과정을 참관하고 이를 보고하는 형태로 했다. 대통령 선거 전날인 4월 26일 학교가 전면 개강하였으나, 선거 후 문리과대학, 법과대학, 상과대학, 사범대학 학생들은 참관 보고 대회를 열어 선거 과정에서 공무원 선거 관여, 자금 살포 등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 4월 27일 대통령 선거를 부정, 불법, 관권 선거로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공명 선거 캠페인은 5월부터 부정 선거 규탄 운동으로 바뀌었다. 5월 11일 총학생회는 야당에게 5월 25일로 예정한 국회의원 선거를 거부할 것을 요구했다. 17일에는 학생 27명이 야당 당사로 몰려가 농성을 벌이다가 이들 중 9명이 경찰에 구속되었다. 문리과대학, 법과대학 학생들은 구속 학생 석방을 요구하면서 단식 투쟁과 가두시위를 벌였다. 문교부는 5월 27일 문리과대학, 법과대학, 사범대학, 상과대학에 휴교령을 내렸다. 공과대학과 교양과정부도 교수회 결의를 거쳐 6월 3일부터 휴교했다. 각 단과대학 휴교는 6월 24일까지 모두 해제했다.

1971년 여름 방학이 지나고 2학기를 시작하자 다시 교련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수강 신청에 임한 학생들은 교련 수강 신청을 거부하고 교련 철폐, 부정부패 규탄을 외쳤다. 성토 대회는 가두시위로 발전하였다. 10월 5일 새벽, 학생 주장에 불만을 품은 수경사 헌병대 소속 군인 22명이 고려대학교에 난입해 도서관에서 농성 중이던 고려대생들을 무차별 구타하고 연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생 시위는 더욱 격렬해졌다. 10월 8일 총학생회는 “정보 정치 종결과 부패 특권층의 처단”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중앙정보부 폐지, 군의 정치적 중립 등을 요구하였다. 13일 서울대

학교 등 전국 14개 대학교 학생회장단이 문리과대학에 모여 고려대 군 난입 규탄, 부정 부패 원흉 처단 등을 요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은 14일 전국적 학생 운동 연대 조직으로 출범할 예정이었던 전국 학생연맹 대의원대회를 급습해 학생 운동 주도 학생을 한꺼번에 연행하였다. 이어 15일에는 서울 지역에 위수령을 발동해 군 병력을 서울대학교(문리과대학, 법과대학, 상과대학) 등 7개 대학교에 진주시키고, 역시 서울대학교 등 8개 대학교에 무기한 휴교령을 내렸다. 학생 1,899명을 연행하고 119명을 구속하였다. 전국 23개 대학교에서 주동 학생 177명을 제적하고 동시에 강제 입영시켰다. 이념 서클 74개를 해체하고 미등록 간행물 14종을 폐간했다. 학생 운동 진영은 타격을 크게 입었다. 서울대학교도 문리대생 17명과 대학원생 3명을 포함한 59명을 학원 질서 문란을 이유로 제적하고 이들 대부분을 강제로 입영시켰다. 또한 문우회, 후진사회연구소, 낙산사회과학연구소, 사회법학회, 사회과학연구회를 비롯한 여러 비중 있는 서클들을 해체하고, 『의단』, 『전야』, 『자유의 종』, 『터』, 『화산』, 『새벽』, 『햇불』, 『향토 개척』 등 영향력이 큰 간행물을 대거 폐간시켰다. 휴업령은 10월 30일 해제되었지만 1971년 3월부터 시작한 교련 반대 운동은 이로써 막을 내렸다.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까지 벌인 3선 개헌 반대 운동과 교련 반대 운동은 사회와 학원에서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선도적인 학생 운동이었다. 박정희 정권의 강력한 탄압과 반복되는 휴교 조치로 인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이 두 운동은 학생 운동의 성장에 기여하였다. 3선 개헌 반대 운동의 실패는 학생들이 자기반성과 함께 새로운 모색을 하게 했다. 전태일 분신을 계기로 학생 운동은 민족, 민주와 함께 민중을 이념적 지향으로 삼았다. 교련 반대 운동 과정에서 학생 운동 진영은 큰 타격을 받았지만 이를 통해 학생 운동은 더욱 조직화되고 목적의식적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학생 운동은 무자비한 유신 통치 아래서도 반유신 민주화 운동을 선도적으로 전개할 수 있었다.

## 5) 반유신 민주화 운동

1971년 교련 반대 운동을 힘으로 진압한 박정희 정권은 학원을 넘어 전 사회를 군사적으로 장악·통제하고자 했다. 1971년 11월 13일 중앙정보부는 이른바 '서울대생 내

란 음모 사건'을 발표하였다. 위수령 이후 학생 시위와 관련하여 수배 중이던 이신범, 조영래 장기표, 심재권, 김근태 등 서울대생 5명이 혁명을 모의했다는 발표였다. 이 사건은 박정희 정권이 장기집권을 위해 조작한 것이었다. 가상의 국가 변란 사태를 근거로 1971년 12월 6일 박정희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12월 27일 '국가보위에 관한특별조치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1972년 10월 17일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고 유신을 선포하여 장기 집권과 독재 체제를 확고히 구축하였다.

1971년 위수령과 1972년 유신은 학생 운동 방식을 크게 변화시켰다. 1960년대 학생 운동의 중심은 각종 서클과 학회였다. 서클과 학회는 대부분 공개적으로 활동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1971년 박정희 정권은 위수령을 발동하여 상당수 서클과 학회를 해체하고 학생 운동 주도 학생들을 체포하여 처벌한 뒤 강제 입영시켰다. 1960년대 방식의 학생 운동은 더 이상 전개하기 어려웠다. 서클과 학회가 불법화하면서 학생 운동을 주도하는 학생들은 참여 인원 부족과 함께 지적 축적의 단절을 겪었다. 그런 까닭에 학생들은 내부 학습과 수련회 등을 통해서 내적 역량을 축적해 갔다.

학생 운동 지도부가 한순간에 잡혀 들어간 공백기를 메우고 학회를 제일 먼저 재건한 조직은 한국사회연구회였다. 한국사회연구회의 점조직식 학회 관리는 유신체제 아래서 학회운영과 학생 운동의 모범이 되었다. 1973년 하반기부터 학생들은 비공개 학회를 중심으로 대규모 유신 반대 시위를 기획했다. 1973년 10월 2일 서울대학교 문리대생 시위는 반유신 민주화 운동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4·19 기념탑 앞에 모인 문리대생 250여 명은 비상 학생 총회를 통해 "자유 민주 체제를 확립하라."는 선언문을 낭독한 뒤 학교에서 2시간 동안 시위를 벌였다. 이어 10월 4일 법대생 200여 명이 교내 정의의 종 앞에 모여 유신 반대를 선언한 후 가두시위를 감행하였다. 이튿날 상대생 300여 명이 교정에 모여 15일까지 시한부 동맹 휴학을 결의하고 연좌 시위를 했다. 경찰은 학생 215명을 연행하여 23명을 구속, 9명을 불구속 입건, 61명을 구류 조치하였다. 학교 당국도 23명을 제적, 18명을 자퇴, 56명을 무기 정학을 시켰다. 이날 시작된 반유신 민주화 운동은 박정희 정권 타도와 민주 정부 수립을 처음부터 명확히 주장했다.

한번 타오른 학생들의 반유신 민주화 운동은 서울대학교를 넘어 다른 대학교로까지 번졌다. 학생들은 시위와 동맹 휴학으로 유신체제에 저항하였다. 반유신 시위는 11월에 더욱 확산하였다. 11월 초 상과대학, 공과대학, 사범대학, 교양과정부, 가정대학 학생들이 동맹 휴학하거나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중순에는 농과대학, 약학대학, 치과대학, 문리대생들이 동맹 휴학과 성토 대회 등을 전개했다. 12월에도 법대생들이 성토 대회와

가두시위를 벌였다. 이와 같이 반유신 민주화 운동을 전개하자 각 단과대학은 11월 27일부터 12월 1일에 걸쳐 조기 방학에 들어갔다. 그러나 학생이 선도한 반유신 민주화 열기는 학교를 넘어 사회로 확산해 '개헌 청원 백만 인 서명 운동'이 벌어졌다. 서울대 학교 총학생회도 개헌 서명 운동을 지지하였다.

박정희 정권은 이러한 반유신 민주화 열기를 잠재우기 위해 1974년 1월 8일 개헌 서명 운동을 전면 금지하는 '긴급 조치 1호'를 선포하였다. 그러나 긴급 조치는 이미 타오르기 시작한 학생들의 반유신 민주화 운동을 중단시킬 수 없었다. 특히 1971년 위수령 때문에 군대에 끌려갔다가 제대한 복학생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반유신 민주화 운동을 벌였다. 1973년 11월 말부터 문리과대학의 이철, 유인태, 서중석 등은 법과대학, 상과대학 학생들과 함께 전국적인 학생 운동 조직을 결성하려 했다. 이들은 각 대학교별로 예비 시위를 벌인 뒤 1974년 4월 일제히 시위를 감행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이들의 동향을 사전에 파악한 박정희 정권은 서중석 등 주모자급 학생들을 3월 28일부터 검거하였다. 이철, 유인태 등은 체포를 피해 잠적하였다. 주도 학생들이 체포 또는 잠적하고 학교에 이미 200여 명의 사복 형사가 들어온 상황에서 시위 당일인 4월 3일 문리과대학에서는 불과 70~80명만 시위에 참여하였다. 다른 대학교도 마찬가지였다. 전국 청년 학생을 조직해 유신체제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히겠다던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이하 민청학련) 주도 학생들의 구상은 이렇게 좌절했다.

반유신 민주화 운동을 잠재울 기회를 엿보던 박정희 정권은 이 사건을 최대한 이용하였다. 이미 상황이 끝난 4월 3일 오후 10시 민청학련과 관련한 일체 행위를 금지하고 민청학련의 강력한 처벌을 규정한 '긴급 조치 4호'를 선포했다. 4월 25일 중앙정보부는 민청학련을 적색 혁명을 기도하는 공산주의자로 규정하고 배후로 2차 '인민혁명당'(이하 인혁당)을 지목하였다. 총 1,024명을 수사해 그중 253명을 군법 회의에 송치하였다. 재판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인혁당 관계자 8명과 유인태, 이철, 김병곤 등 민청학련 관계자 7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또 관련 학생을 대부분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했다. 이후 박정희 정권은 1975년 2월 12일 유신 헌법 찬반 국민 투표에서 승리하자 15일 민청학련 사건 관련 학생을 석방하였다. 그러나 인혁당 관계자 8명은 대법원 확정 판결 다음 날인 1975년 4월 9일 전격적으로 사형을 집행하였다. 당시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법학자협회에서는 사형이 집행된 이날을 '사법 사상 치욕의 날'로 선포하였다. 이 사형 집행은 흔히 '사법 살인'으로 평가된다.

'긴급 조치 4호' 발동과 민청학련 사건으로 1974년 상반기 학생 운동은 일시 위축했

다. 그러나 지하화한 점조직식 학회의 발전은 산발적이고 자연 발생적이던 학생 운동을 더 조직화했다. 민청학련 사건으로 많은 학생이 구속됐지만 더 조직화한 학회 덕분에 1971년 위수령 때만큼 큰 공백은 없었다. 긴급 조치가 해제되자 1974년 하반기부터 반유신 민주화 운동과 함께 구속 학생 석방을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9월 26일 총학생회가 구속 학생 석방을 위한 서명 운동을 전개하였다, 10월 8일 법대생들이 '헌법 개정' 결의문을 채택한 이후 상과대학, 공과대학, 미술대학, 문리과대학, 농과대학, 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가정대학 학생들의 시위, 서명 운동, 농성 등이 이어졌다.

1975년 종합화와 함께 관악 캠퍼스에서 신학기를 시작하면서 반유신 민주화 운동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다. 먼저 학생 운동을 이끌었던 학회 조직이 변했다. 특히 문리과대학이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으로 나뉘자 학생들은 각 단과대학별로 학회를 재편하였다. 예를 들어 후진사회연구회는 관악 캠퍼스 이전 이후 인문대학 '역사철학회'와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연구회'로 분리되었다. 기존 학회는 각 단과대학별로 학회 재건 책임자를 정했다. 이들은 대체로 위수령 때 입대했다가 복학한 학생이거나 아직까지 구속되지 않은 몇몇 학생이었다. 1975년 5월 박정희 정권이 '긴급 조치 9호'를 선포하고 학생회를 해체하자 학생 운동은 학회를 중심으로 더욱 은밀하게 조직되었다. 학회는 학생을 내부에서 교육하고 학생 운동 주도 세력을 재생산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단과대학을 넘어서는 각종 집회나 시위를 직접 계획하고 학생들을 동원하는 역할까지 하였다. 학습, 운동, 동원 조직이 철저하게 하나가 되었다. 여기서 1980년대 중반까지 학생 운동 조직의 근간을 이루던 '패밀리' 체계의 초기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당시 학회는 형식상 등록한 학회와 이념 학습과 운동을 주도하는 지하 서클의 이중 구조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10여 개의 지하 서클은 서클 연합 조직으로 서로 연결되었다. 형식상 학회는 1학년들을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데 이용했다. 1학년 2학기쯤 되면 건실한 후배들을 골라 지하 서클에서 집중적인 세미나와 함께 수련회, 농활, 공활 등을 실시했다. 학회 운영 책임자는 3학년이 맡았는데 가능한 한 시위를 주도하지 않고 1, 2학년들을 교육하는 데 집중하였다. 서클 연합 조직은 각 지하 서클에서 뽑힌 운동 담당자로 구성했는데 여기서는 집회 장소와 일시를 정하고 각 학회를 통해 학생을 동원했다. 아울러 정세를 분석하고 향후 학생 운동 방향과 계획을 정하기도 했다.

학회의 학습 체계를 살펴보면, 1학년들은 처음에 카(E. H. Carr)의 『역사란 무엇인가』나 리영희의 『전환 시대의 논리』 같은 책으로 교양 학습을 했다. 그 후 한국 경제사, 철학, 한국 근대사, 정치 경제학 등 분야별 학습을 했다. 주요 교재는 일어로 된 『철학 개

론』, 『서양경제사』나 영어로 된 돕(Maurice Dobb)의 『자본주의 발전 연구(Studies in the Development of the Capitalism)』 등이었다. 심화 학습을 위해 학회를 뛰어넘는 소모임을 구성하기도 했는데 거기서는 영어로 된 『자본』을 공부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1970년대 학생들은 1960년대 민족주의적 사고 틀을 확대하여 민중적이고 계급적인 틀로 사회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원전을 공부하는 것은 아직 상당히 조심스러운 상황이었다.

또한 1970년대 중반부터 학교를 벗어나 노동 현장에서 운동하는 학생들이 늘어났다. 이들은 한국 사회의 모순을 자본주의에서 찾고 민중 지향의 운동 노선을 분명히 했는데, 공장에 직접 뛰어들거나 도시산업선교회나 가톨릭농민회 등에 참여하였다. 또한 긴급조치 9호 발동, 학내 경찰 진주, 학도호국단 부활 등으로 학내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교회나 종교서클을 통해 실천의 계기를 마련하려는 학생들도 늘어났다. 민중신학 관련 교회들의 대학부, 흥사단아카데미 등이 주요 활동 무대였다.

종합화 직후 관악 캠퍼스에서 1975년 3월 14일 자연 계열 기초 과정 학생 300여 명의 집회를 시작으로 학원 민주화를 주장하는 각종 집회와 시위가 이어졌다. 3월 24일 아크로폴리스에 학생 1천여 명이 모여 '학원 민주화를 위한 자유 성토 대회'를 열고 민주 학칙 제정, 석방 학생 복교, 학원 사찰 중지 등을 요구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곧 공과대학교 농과대학 캠퍼스로 이어졌다. 학원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 시위는 4월 더욱 가열되었다. 4월 3일 학생 2천여 명이 아크로에 모여 구속 학생 석방과 석방 학생 복교를 요구하며 신림 사거리까지 가두시위를 벌였다. 4일 농대생들의 시위가 있었고 7일 다시 아크로에서 비상 학생 총회를 열고 유신 헌법 철폐와 민주 헌법 제정을 촉구하였다. 이에 학교 당국은 4월 8일 임시 휴교에 들어갔다. 이날 박정희 정권은 '긴급 조치 7호'를 발동해 고려대학교에 휴교령을 내리고, 다음날 인혁당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사형을 신속하게 집행하였다.

4월 11일 농과대학에서 학생 300여 명이 유신체제를 규탄하는 '시국 성토 대회'를 열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연사로 나선 4학년생 김상진이 「양심 선언문」과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장」을 낭독한 후 할복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다음날인 12일 김상진은 끝내 숨을 거두었다. 박정희 정권은 김상진이 사망한 직후 장례식도 없이 시신을 화장하였고 학생들은 크게 분노했다. 박정희 정권은 김상진의 장례식을 금지했고 나아가 5월 13일 '긴급 조치 9호' 선포로 유신 헌법에 대한 일체의 반대 행위와 학내 집회, 시위를 전면 금지했다. 하지만 학생들은 김상진의 장례식을 5월 22일 아크로에서 예정대로 강



행하였다. 학생 4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례식을 끝낸 후, 학생 약 5백 명이 교문 밖으로 진출을 시도했다. 경찰은 시위대를 해산시키고 모두 56명을 구속하였다. 긴급 조치 9호와 유신체제에 정면으로 저항한 이날 장례식으로 서울대학교 총장이 사임했고 서울 남부경찰서장과 치안본부장은 경질되었다.

김상진 장례식 이후 학생 운동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다. 그러나 학생 운동은 1976년 말부터 다시 기지개를 켜다. 1976년 12월 8일 4학년 법대생 3명이 「민주 구국 선언문」이라는 유인물을 뿌리고 유신 철폐, 긴급 조치 해제, 구속 인사 석방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1977년 3월과 4월 관악 캠퍼스에서 몇몇 소규모 시위를 벌인 뒤, 같은 해 10월 7일 사회학과 주최로 열릴 예정이던 ‘1920년대 한국 민족 운동의 고찰’이라는 심포지엄을 둘러싸고 다시 한 번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당시 학교 당국은 학내 분위기를 이유로 심포지엄 연기를 종용했는데, 이에 반발한 학생 5백여 명이 학원 탄압 중지, 긴급 조치 해제, 유신 헌법 철폐 등을 외치며 강의실에서 농성을 벌였다. 강의실 밖에서도 학생 1500여 명이 동조 시위를 하였다. 이 사건으로 8명이 구속되고 서울대학교는 10월 8일부터 20일 간 휴교했다. 휴교가 끝나자 몇몇 학생은 11월 11일 학생식당에서 「민주 구국 투쟁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학교에 상주한 기관원들이 이들을 곧바로 체포했지만, 이에 격분한 학생들이 가담하면서 시위는 점차 대규모로 확산하였다. 특히 이날 일부 학생들은 경찰의 연행을 피해 도서관에 들어가 장기 농성 준비를 갖춘 뒤 마이크를 이용하여 선언문을 낭독하고 반정부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시위 방식이었다. 이 시위는 약 3천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대규모 시위였다.

학생 시위는 1978년에 더 활발해졌다.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전국 주요 대학교에서 거의 매달 반유신 시위를 벌였다. 6월 12일 학내 시위에서 주도 학생들은 1동 3층 난간에 서서 선언문을 낭독하였는데, 이후 학생들은 건물 난간을 이용하는 시위를 많이 벌였다. 학내에 형사와 전투 경찰이 상주한 상황에서, 주동자가 학생들이 모일 때까지 5분을 버틸 수 있느냐가 시위 성공의 관건이었기 때문이다. 이후 시위가 일어날만한 건물 옥상 문은 굳게 잠겼고 중앙도서관 난관에도 곳곳에 칸막이가 설치되었다. 새로운 시위 양상은 학교 밖에서도 나타났다. 특히 1978년 6월 26일 광화문 시위는 학생운동의 새로운 발전을 보여줬다. 이날 학생들은 경찰의 철통 같은 봉쇄를 뚫고 광화문 일대에서 산발적인 시위를 벌여 박정희 정권을 놀라게 했다.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등 몇 개 대학의 이념서클들이 연합한 이 시위는, 범대학적 연합투쟁의 가능성을 보였고 국민을 직접 선전 대상으로 하는 1980년대 도심 가두시위의 원형이 되었다.

1979년에도 반유신 민주화 운동은 계속되었다. 10월 19일에는 강제로 휴학을 당한 학생들이 주도하는 시위가 관악 캠퍼스에서 벌어졌다. 박정희 정권은 마구잡이로 학생들을 강제 징집하거나 감옥에 집어넣었지만 반유신 민주화 운동은 사회 전반으로 점점 퍼져나갔다. 1979년 10월 부마 항쟁은 반유신 민주화 운동의 정점이었고, 결국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되면서 박정희 정권과 유신체제는 드디어 막을 내렸다.

반유신 민주화 운동은 1973년부터 1979년까지 끈질기게 계속한 선도적 학생 운동이었다. 박정희 정권은 경찰, 중앙정보부, 군대뿐만 아니라 긴급 조치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비민주적 수단까지 동원하여 반유신 민주화 운동을 탄압했지만 학생들의 저항을 막을 수 없었다. 오히려 학생들은 더욱더 은밀하고 조직적인 학생 운동 체계와 다양한 시위 방법으로 박정희 정권과 유신체제에 대항했다. 정권의 무자비한 탄압은 학생 운동을 더욱 단련시키고 성장시켰다. 민주주의를 향한 학생들의 열정과 희생은 반유신 민주화 운동을 사회 전반에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비록 박정희 정권은 내부에서 붕괴했지만 그 붕괴를 가속화한 것은 학생과 시민들의 반유신 민주화 운동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반유신 민주화 운동은 성공하였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이 물러간 자리에 곧바로 새로운 군사 정권이 들어서 많은 학생과 시민을 더욱 무자비하게 탄압했다. 이에 맞서 학생 운동은 소수 학생들의 선도적인 문제 제기 수준을 넘어 많은 학생들의 대중적인 참여에 기반하여 군사 정권에 대항했다.

### 제3절 ‘대중적’ 학생 운동의 발전(1979~1996년)

#### 1) ‘서울의 봄’ 과 ‘서울역 회군’

유신체제 아래 억눌리던 학생들은 1979년 10·26 사태 이후 학원과 사회 민주화를 위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1980년 1월 서울대를 비롯한 각 대학교는 반유신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제적된 학생들의 복교를 결정하고, 이른바 ‘정치 교수’로 낙인찍어 교단에서 내몰았던 해직 교수도 복직시켰다. 학생들은 ‘학원 민주화’와 ‘학생 활동 자율화’ 등을 당면한 운동 방향으로 정하고 ‘학생회부활추진위원회’를 통해 학내 운동 역량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다. 1980년 3월 28일 서울대에서 1975년 이후 처음

으로 총학생회가 출범하였다. 또한 4월 말에는 정권의 안보 논리에 맞서 병영 집체 훈련을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운동 방법을 둘러싸고 두 가지 주장이 맞섰다. 하나는 재학생을 중심으로 한 '단계적 투쟁론'이었다. 단계적 투쟁론을 주장하는 학생들은 국민이 아직 신군부 동향을 알지 못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신군부가 정권 찬탈 시도를 가시화할 것이므로 그때 전면 투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학기 초에는 극한적 투쟁을 피하고 학내 문제를 중심으로 활동하여 학생 운동의 대중 역량을 확보한 다음 점차 정치적 문제로 발전해 가야 한다고 보았다. 다른 하나는 1970년대 학생 운동을 주도하던 복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전면적 투쟁론'이었다. '전면적 투쟁론'을 주장하는 학생들은 이미 재야와 연대하여 1979년 11월 24일 소위 'YMCA 위장 결혼 사건'을 통해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출 분쇄", "유신 독재 완전타도" 등을 주장한 바 있었다. 또한 학생 운동이 민주 정부 수립을 위한 정치적 요구를 전면으로 내걸고 적극적인 가두 정치 운동을 벌여야만, 유신 잔재를 청산하고 신군부의 집권 음모를 막을 수 있다고 보았다.

1980년 4월 이후 전두환과 신군부의 정권 장악 음모가 더욱 노골화하자 학생 운동 전반에서 전면적 투쟁론이 힘을 얻었다. 그리하여 1980년 5월 2일 서울대에서 열린 '민주화를 위한 시국 성토 대회' 이후 각 대학교로 신군부에 저항하는 시위가 확산되었다. 학생들은 "비상계엄 해제", "전두환 퇴진", "구속 인사 석방" 등 정치적 요구를 내걸고 가두로 진출하였다. 신군부의 쿠데타설, 학원 점령설 등이 유포되면서 당시 학생 운동 지도부였던 각 대학교 총학생회장단은, 군부 집권을 저지하기 위한 전면 투쟁이나 아니면 역량 보존을 위한 전술적 후퇴냐 하는 기로에서 명확한 방침을 정하지 못했다. 그러나 5월 10일 전국 23개 대학교 총학생회장들은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고, 13일 서울 지역 총학생회장단이 전면적인 가두시위를 결정했다. 다음날 전국적으로 학생 6만 명이 가두시위를 벌였다. 5월 15일에는 전국 60여 개 대학교 학생 수십만 명이 곳곳에서 대규모 가두시위를 벌였다. 특히 서울에서는 학생 10만, 시민 30만이 서울역 광장을 뺨뺨이 메우고 "계엄 철폐"를 외치면서 연좌 시위를 벌였다. 하지만 총학생회장단은 군부에게 쿠데타의 빌미를 주지 않고 학생 운동 역량을 보존해야 한다는 이유로 연좌 시위를 풀고 자진 해산하였다. 결정적인 순간에 한 전술적 후퇴를 훗날 학생들은 "서울역 회군"이라고 불렀다. 서울역 회군 직후 5월 17일에 전두환과 신군부는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쿠데타를 일으키지만 이미 전술적으로 후퇴한 학생들은 쿠데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1980년 3월 이후 집회 과정에서 학생들은 비상계엄이 확대될 경우 학

과를 중심으로 이미 결성한 비상연락망을 통해 바로 시위에 들어가기로 결의했지만, 5월 18일 1차 집결지인 서울역, 2차 집결지인 영등포역 시위는 산발적인 시위에 그치고 말았다. 쿠데타와 함께 학교는 휴교했으며 어렵게 재건한 학생회는 곧 해체했다. ‘서울의 봄’ 동안 이룩한 민주화 성과는 모두 물거품처럼 사라졌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역 회군’은 당시 학생 운동 지도부가 이른바 ‘대기주의’에 빠진 채 학생 운동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사건이었다.

## 2) 5·18 광주 항쟁과 ‘무림-학림 논쟁’

1980년 5월 15일 서울역 회군과 17일 휴교령 때문에 학생 운동은 다시 지하로 숨어들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광주 지역은 전남대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5·17 쿠데타에 저항하는 시위를 계속했다. 18일 계엄군이 전남대생의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는 과정에서 5·18 광주 항쟁이 일어났다. 27일까지 무려 5천 명이 넘는 광주 지역 학생과 시민이 계엄군의 무자비한 진압에 희생당했다. 광주 항쟁을 진압한 뒤 전두환 정권이 들어섰다. 학생 운동 진영을 비롯한 민주화 세력의 움직임은 일시적으로 위축되었다.

하지만 5·18 광주 항쟁은 이후 학생 운동의 발전에서 커다란 밑거름이자 동력이 되었다. 쿠데타와 광주 학살을 통해 집권한 전두환 정권은 처음부터 정통성과 도덕성을 갖추지 못했다. 학생들에게 전두환 정권은 타도 대상일 뿐이었다. 또한 광주의 비극은 전두환 정권의 ‘원죄’인 동시에 쿠데타에 굴복해 무기력하게 후퇴한 학생들의 ‘원죄’이기도 했다. 1980년대 학생들은 광주 항쟁 당시 상황을 찍은 비디오를 돌려 보며 정권에 대한 분노와 자신에 대한 반성, 그리고 운동에 대한 의지를 불태웠다. 한마디로 ‘광주’는 1980년대 학생 운동의 상징이었다.

5·18 광주 항쟁 이후 학생들 사이에서 ‘반미 감정’이 퍼져나갔다. 1970년대까지 학생들은 미국을 한국 민주화의 지원자로 생각하고 독재 정권과 미국을 분리해서 사고하는 경향이 강했다. 5·18 광주 항쟁 당시 광주의 학생과 시민도 미국의 항공모함 파견을 자신들의 고립된 투쟁을 지원하러 온 것으로 생각하고 기뻐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은 광주의 학생과 시민을 도와주는커녕 계엄군의 무력 진압을 승인하고 전두환 정권을 지지했다. 5·18 광주 항쟁 이후 많은 학생들은 미국을 민주화의 지원자가 아니라 모순의 근원이자 극복의 대상으로 생각하였다. 이를 계기로 ‘반미’는 1980년대 학생 운

동에서 주요한 화두가 되었다.

또한 학생들은 광주의 비극을 교훈 삼아 사회 모순의 본질과 성격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이에 입각하여 학생 운동을 과학적으로 전개하고자 했다. 1980년대 학생 운동에서 또 하나의 화두는 바로 ‘과학’이었다. 사회 과학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 등의 원전 학습도 치열하게 이루어졌다. 과학적 인식과 실천을 둘러싼 학생 운동 내의 노선 논쟁도 본격화되었다.

학생 운동 진영은 1984년 학생회를 재건할 때까지 최소한의 교육과 실천을 보장하기 위하여 ‘패밀리’라는 독특한 조직을 만들어 활동했다. 1980년대 전반기 서울대 학생 운동은 문화패들이나 ‘5대 패밀리’라 부르던 이념 서클이 주도했다. 당시 패밀리와 학회는 학생들을 이중으로 의식화했다. 패밀리는 비공개 조직이지만 학회는 공개 조직이었고, 패밀리는 학회, 서클 등을 포괄하고 매개하는 기능을 했다. 학회의 지도는 보통 패밀리에 몸담고 있는 선배가 담당했는데, 그들은 학회에서 눈에 띄는 후배들을 패밀리로 끌어들었다. 한 패밀리 안에도 여러 학습 단위가 있었는데, 1학년은 『해방 전후사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 현대사를 공부했고, 학년이 올라가면서 철학, 정치 경제학, 경제사, 세계 경제론, 운동사, 혁명사, 운동론 등을 공부하였다. 패밀리는 비밀스럽게 운영했기 때문에 같은 패밀리에 있더라도 공식적으로 서로 모르는 것이 원칙이었다. 패밀리와 학회의 이중 구조는 1980~1984년에 이르는 억압적인 정치 상황에서 학생 운동을 유지하고 확장하는 데 유용한 구조였다.

휴교령이 끝나고 1980년 9월 개강했지만, 유신 시절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 많은 기관원이 학교에 상주하였다. 한동안 학생들은 별다른 움직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1980년 12월 11일 관악 캠퍼스 학생식당 앞에서 약 1천여 명의 학생이 「반제 반파쇼 투쟁 선언」을 발표하고 시위를 벌였다. 5·18 광주 항쟁 이후 최초로 벌인 시위였다. 이 시위로 1977년 이후 활발하게 활동해 온 한국사회연구회 중심의 언더지도부 90여명이 구속 내지 강제 징집되었고, 경찰은 이들을 ‘안개 속의 서울대 학생 운동 조직’이라는 의미에서 ‘무림(霧林)’으로 불렀다.

1981년에 들어와 서울대생은 더욱 활발한 학생 운동을 벌였다. 특히 ‘무림’보다 조직적이고 전투적인 ‘전국민주학생연맹’(이하 전민학련)이 조직되면서 시위는 더 활발해졌다. 1981년 3월 19일 학생회관 4층 옥상에서 화성기와 횃불을 든 학생 2명이 구호를 외치자 순식간에 모여든 학생 1천여 명이 시위를 벌였다. 구호는 “살인마 전두환 타도”, “파쇼 독재 정권 타도”였다. 5월 27일 사회과학대학에서 열 예정이던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 위령제'를 경찰이 저지하자 1천 명이 침묵 시위를 벌였다. 이때 김태훈(경제학과 4학년)이 도서관에서 “전두환 물러가라”고 외치며 투신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진 김태훈 주변에 학생이 모여들자 경찰은 최루탄을 쏘았고 격앙한 학생들은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김태훈의 투신은 학생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광주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김태훈의 투신 당일 경찰이 행한 무자비한 대응은 이후 학생 운동을 더욱 거세게 만들었다. 하지만 1981년의 학생 운동은 6월 10일 홍사단 아카데미 계열의 전민학련 지도부 30명이 연행되면서 일단 주춤한다. 경찰은 당시 이들을 같이 연루된 노동자 그룹과 구별하여 ‘학생 측 조직’이라는 의미에서 ‘학림(學林)’으로 불렀다.

5·18 광주 항쟁 이후 학생 운동이 더 조직적이고 과학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학생 운동 노선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다. 이 논쟁은 경찰이 학생 운동 주도 학생들을 검거하면서 이름 붙인 무림 사건, 학림 사건이라는 이름 때문에 흔히 ‘무림-학림 논쟁’으로 부른다. ‘무림’은 노동 운동 등 기층 민중 운동이 아직 낮은 수준이고 지도력도 부재하기 때문에, 유일하게 정치 투쟁 역량이 있는 학생 운동은 산발적이고 소모적인 시위 만능주의를 지양하고 학생 운동의 내적 준비와 대중성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를 비판하는 ‘학림’은 학생 운동은 선도적 문제 제기 세력이며, 노동 운동은 주도적 문제 해결 세력이라고 규정하고, 민중 운동이 취약하고 운동의 전체적 분위가 침체한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조직화한 학생 운동이 지속적인 시위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전체적인 투쟁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핵심 학생들은 모두 경찰에 체포되었지만 양측은 소책자를 만들어 서로 비판과 반비판을 하며 논쟁을 계속했다. 논쟁 과정에서 학생 대중 조직(학도호국단, 씨클, 학회 등)의 확보와 활성화, 지속적인 정치 투쟁(학내 시위 및 가두시위), 그리고 학생 운동 출신 활동가의 야학과 노동 현장으로 대거 이전 등 구체적인 실천이 이루어졌다. 1980년대 초 무림-학림 논쟁은 학생 운동의 과학적 정세 인식과 방향 모색 과정에서 발생했다. 양측의 인식이 아직 체계화한 수준은 아니었으나, 이후 학생 운동이 대중화하는 과정에서 학생 운동 노선을 둘러싼 논쟁은 훨씬 깊어진다.

### 3) 학원자율화조치와 학생 운동의 조직화

전두환 정권은 집권 초기 학생 운동을 강하게 탄압하였다. 1983년 5월 24일 학생 1천여 명이 벌인 교내 시위 당시 진압을 위해 학교 안에 투입한 경찰이 인문대학과 사회과 학대학 건물을 포위하고 학생을 무차별적으로 연행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각 학과 사무실과 교수 연구실 문까지 부수고 진입하여 숨어 있는 학생을 연행하였다. 또 항의하는 조교들을 폭행하고 교수들에게 폭언과 함께 심한 인격적 모욕을 가했다. 이날 모두 465명이 연행되었고, 그 가운데 4명이 구속, 18명이 강제 징집, 2명이 무기 정학을 당했다. 이 사건은 평소 시위에 소극적이던 학생들에게까지 큰 충격을 주었다.

1983년 말부터 전두환 정권의 태도가 달라졌다. 정부는 1983년 12월 21일 ‘학원자율화조치’를 발표하였다. 학생 운동 때문에 제적당한 학생의 석방과 복교의 길이 열렸다. 12월 29일에는 학교에 상주하던 사복 경찰이 완전히 철수했다. 1983년 말부터 시작된 학원자율화조치는 1984년 ‘유화 국면’을 조성하였다. 유화 국면은 상대적으로 안정기에 접어든 전두환 정권이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올림픽을 앞두고 호의적인 국제 여론을 조성하고, 1985년으로 예정한 총선거에 대비하여 민심을 수습하려고 조성한 것이었다. 1984년 학생 운동 진영은 한편으로는 유화 국면을 이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유화 국면의 기만성을 알리려고 학원 민주화 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여 나갔다. 학원 민주화 운동의 결과 학생들은 학도호국단을 해체시키고 학생회를 재건하였다.

1984년 학생회 재건은 학생 운동 대중화의 전환점이었다. 특히 학생회의 학생 동원력은 대중적 학생 운동의 발전에서 매우 중요했다. 1984년 학생회를 재건한 뒤 그 동안 학생 운동의 중심이던 패밀리는 점차 해체하기 시작하여 1986년 경 완전히 소멸하였다. 해체한 패밀리는 공개 서클로 전화하여 동아리연합회에 들어가거나, 독자적인 노선의 정파로 자리 잡았다. 패밀리가 해체하고 학과 단위 학회가 늘어났지만 학회와 다른 ‘언더 학습팀’은 여전히 있었다. 지금까지도 존재하는 ‘학생회-정파-언더 학습팀-학회’로 이어지는 학생 운동의 복잡한 구조는 이때부터 등장했다.

학생회를 막 재건하던 1984년 9월 ‘서울대 프락치 사건’이 일어났다. 9월 17일 서울대 복학생협의회 기관지 『전진』의 창간호 발간 대회를 끝낸 뒤 복학생협의회는 가짜 학생 한 명을 적발했다. 총학생회 선거 유세일인 21일과 27일에도 계속 가짜 학생들을 적발했다. 당시 학내에 ‘프락치’라고 부르는 사찰 기관의 정보 수집자가 학생으로 가장하

여 학생 동향을 파악하는 일이 많았다. 복학생협의회 학생들은 붙잡은 가짜 학생이 프락치인지 여부를 조사하였다. 이후 그 가짜 학생들은 학생들이 조사 도중 폭행을 했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으로 당시 복학생협의회 의장 유시민(경제학과 78학번) 등 9명이 구속, 수배를 당했고 학생대표 백태웅 등 관련 학생 7명이 제적당했다. 하지만 학생들은 이 사건의 진상 규명과 징계조치 철회를 주장하며 10월 중순 중간고사를 거부하였다. 이에 정부는 시험을 치르는 학생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10월 24일 약 6,500명이나 되는 경찰을 학교에 투입하였다. 그 동안 불안하게 유지하던 학원자율화조치를 사실상 철회한 것이다.

전두환 정권의 학원자율화조치 철회에 맞서 학생들은 각 대학교를 포괄하는 학생 운동 연합 조직을 만들어 더 체계적인 학생 운동을 벌였다. 11월 3일 ‘학생의 날’에는 전국 42개 대학교 학생 2천여 명이 연세대학교에 모여 사회 민주화 운동을 통일적으로 벌이기 위한 선도적 투쟁 조직으로 ‘민주화투쟁학생연합’ (이하 민투학련)을 결성하였다. 서울대생 최형두(사회학과 81학번)가 의장을 맡은 민투학련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1984년 11월 14일 당시 여당이던 민정당 당사를 점거하여 농성을 시작했다. 1985년 2월 12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인 신민당이 크게 약진하자 학생 운동은 더 활성화했다. 1985년 4월 17일 각 대학교 학생 운동 세력은 ‘전국학생총연합’ (이하 전학련)이라는 연합 조직을 결성하고 의장으로 서울대 총학생회장 김민석(정치학과 4학년)을 선출하였다. 또한 전학련 산하에 ‘민족통일, 민주쟁취, 민중해방을 위한 투쟁위원회’ (이하 삼민투)라는 공개 투쟁 조직을 만들었다. 이전부터 이어지던 학생 운동의 민족, 민주, 민중 이념은 1980년대 학생 운동의 조직화, 과학화, 대중화 과정에서 더 뚜렷해졌다. 이러한 ‘전학련-삼민투’ 체제는 당시 학생 운동 노선 논쟁의 타협물이었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과감한 정치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반합법 투쟁 위원회를 강조하는 입장(‘깃발’)과, 총선 후 유화 국면은 장기화할 것이기 때문에 먼저 학내 대중 조직인 학생회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중심으로 공개적인 정치 투쟁을 하자는 기존 학생 운동 지도부의 입장(‘반깃발’)이 논쟁 끝에 전학련-삼민투 체제로 귀결된 것이다.

전학련-삼민투 체제 아래서 학생 운동은 학교 안 문제보다 ‘광주 문제’, ‘미국 문제’, ‘헌법 개정 문제’ 등 정치 사회적 문제에 집중했다. 1985년 5월 10일 학생들은 ‘광주 항쟁 진상 규명 대회’를 열고 다음날부터 ‘광주 항쟁 피해 보상 및 진상 규명 요구를 위한 서명 운동’을 전개하였다. 15일에는 전국 29개 대학교 학생 1만여 명이 “광주 사태 진



상 규명 및 책임자 처단”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그리고 23일 삼민투 산하 ‘뽕주학살원흉처단투쟁위원회’ 소속 서울대 등 5개 대학교 학생 73명이 서울 미문화원을 점거하여 26일까지 농성을 벌였다. 서울대생 함운경(물리학과 82학번)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7월 20일 정부는 미문화원 사건 관련 학생의 징계를 미온적으로 했다는 이유로 서울대학교 총장을 경질했다. 또 전학련-삼민투 체제 아래서 학생 운동이 격해지자 학원안정법을 제정하여 학생 운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고 했다. 이에 모든 민주화 운동 세력은 1985년 7월 ‘민중민주운동탄압저지투쟁위원회’를 결성하여 공동 대응하였다. 서울대학교 학생도 8월 16일 ‘학원안정법저지결사투쟁위원회’를 만들었다. 학생과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한 정부는 결국 학원안정법 제정을 보류하였다. 그러나 1985년 10월 29일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이하 민주위) 소속 학생 26명이 구속당하는 등 학생 운동에 대한 탄압이 이어졌다.

학생 운동 노선을 둘러싼 논쟁도 더 깊어졌다. 당시 서울대를 중심으로 조직한 민주위는 팸플릿 『깃발』에서 “비합법 기간 조직-반합법 투쟁 조직-합법 대중 조직”의 조직 구도를 제기하며 목적의식적 운동, 조직적 운동을 주장하였다. 민주위의 주장은 학생 운동의 대중성보다 선도성에 초점을 맞췄다. 민주위의 주장을 많이 반영한 전학련-삼민투 체제 역시 학생 대중보다는 활동가를 중심으로 하였다. 학생회를 재건해 대중적 학생 운동의 기반을 마련했으나 학생 운동에서 학생회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작았다. 또한 1985년 하반기부터 개헌 투쟁의 목표와 새 헌법 제정 과정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쟁이 점차 한국 사회 변혁 노선 논쟁으로 발전하였다. 그동안 학생 운동의 주요 노선이던 ‘삼민 이념-민족 민주 혁명 노선’(NDR)이 점차 ‘반제 민족 해방 민중 민주 혁명 노선’(AINLPDR)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이 노선 논쟁은 학생 운동 조직의 분화와 재편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학생 운동은 서클 중심 경향을 극복하고 한 차원 높은 조직 체계를 만들었다.

학생 운동 내부의 노선 논쟁과 조직 재편 결과 학생들은 1986년 ‘구학련-자민투’와 ‘전민학련-민민투’로 나뉘어 결집하였다. ‘구국학생연맹’(이하 구학련)은 1986년 3월 29일 학생 100여 명이 서울대에 모여 결성한 비공개 투쟁 조직이었다. 구학련은 ‘민족 해방 민중 민주 혁명 노선’(NLPDR)에 따라 1986년 반미 운동을 주도하였다. 4월 19일 구학련은 산하 공개 투쟁 조직으로 ‘반미자주화반파쇼민주화투쟁위원회’(이하 자민투)를 결성하고 기관지 『해방 선언』을 발간하였다. 반면 기존 ‘민족 민주 혁명 노선’(NDR)을 고수하는 학생들은 ‘전국반제반파쇼민족민주학생연맹’(이하 전민학련)을 결성하였

다. 또한 산하 공개 투쟁 조직으로 ‘반제반과소민족민주투쟁위원회’(이하 민민투)를 별도로 구성하고 기관지 『민족 민주 선언』을 발행하였다. 구학련-자민투는 “반전 반핵 양키고 흙”의 슬로건을 선명하게 내걸고 직선제 개헌을 포함한 민주적 개헌을 지지하였다. 전민학련-민민투는 “헌법 제정 민중 의회 소집”을 개헌 투쟁의 기본 노선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전자를 “민족 해방(NL)” 진영, 후자를 “제헌 의회(CA)” 진영이라고 불렀다. 서울대는 1985년까지 CA 진영이 강했으나 1986년 이후 NL 진영이 우세했다.

자민투와 민민투 결성 이후 1986년 학생 운동은 매우 격렬하게 전개되었다. 1986년 4월 28일 전방 입소 거부 시위를 주도하던 반전반핵투쟁위원장 이재호(정치학과 83학번)와 자연과학대학 학생회장 김세진(미생물학과 83학번)이 “양키의 용병 교육 전방 입소 결사 반대”와 “한반도 핵 기지화 반대”를 외치며 분신하였다. 5월 20일 아크로에서 문익환 목사의 강연이 열리는 도중 이동수(원예학과 83학번)가 “미국은 이 땅을 떠나라”고 외치며 학생회관에서 분신 뒤 투신하였다. 같은 달 박혜정(국문학과 83학번)도 “회색 인간”으로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유서를 남기고 한강 대교에서 투신하였다. 연이은 분신과 투신은 암울한 시대적 상황에 저항하는 학생들의 극단적인 선택이었다. 이들의 희생은 학교 안팎의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이후 학생 운동에 큰 자극이 되었다.

1986년 5월 3일 인천에서 신민당이 개최한 ‘개헌 현판식’에 학생, 노동자, 시민 등 3만 명이 결집하여 밤늦게까지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전두환 정권은 이날 집회와 시위를 빌미로 학생 운동과 민주화 운동에 대한 탄압의 강도를 높였다. 이에 자민투를 중심으로 한 NL 진영은 10월 28일 건국대에서 ‘전국반외세반독재애국학생투쟁연합’(이하 애학투련)을 발족시켜 정권의 탄압을 정면으로 돌파하고자 했다. 그러나 발족식 당일 경찰은 애학투련 학생들을 건국대 도서관에 가두고 참가자 1,529명 전원을 강제 연행하여 그중 1,290명을 구속했다. 이 사건을 흔히 “건대 사태”라고 부른다. 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강경한 진압과 처벌로 학생 운동은 커다란 손실을 입었고 회복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렸다.

1983년 말 학원자율화조치와 1984년 학생회 재건으로 학생 운동은 더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학생 운동은 과학적인 인식과 노선을 강조하면서 노선 논쟁과 조직 분화, 재편을 거듭했다. 그 결과 학생 운동 세력은 NL 진영과 CA 진영 두 세력으로 나뉘어 재편하고 각종 투쟁 조직을 만들었다. 그러나 역량을 고려하지 않은 투쟁과 소모적인 논쟁은 학생 운동의 발전에 장애였다. 또한 학생회 재건 뒤에도 학생 운동에서 학생회가 차지

하는 비중은 여전히 작았다. 학생회의 재건과 학과 단위 학회의 발전으로 대중적 학생 운동을 전개할 기반은 닦았으나 학생 운동은 아직 학생 대중에게 뿌리내리지 못했다. 학생 운동은 여전히 합법-비합법 투쟁 조직 중심이었다. 대중적 학생 운동은 1987년 6·10 항쟁에 가서야 비로소 폭발적으로 전개된다.

#### 4)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6·10 항쟁

1986년 10월 건대 사태 이후 학생 운동이 침체하자 당시 모든 민주화 운동 세력이 요구한 개헌 추진도 어려워졌다. 1987년 1월 전두환 대통령은 신년 국정 연설에서 합의 개헌을 할 수 없으면 중대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고 언급하여 민주화 운동 세력을 더욱 압박하였다. 하지만 수세에 몰리던 민주화 운동 세력은 1월 14일 서울대생 박종철(언어학과 84학번) 고문치사 사건을 계기로 다시 결집하였다. 박종철의 죽음은 6·10 항쟁과 직선제 개헌의 직접적인 원동력이었다.

1987년 1월 14일 새벽 경찰은 박종철을 하숙집에서 남영동 대공 분실로 연행하였다. 경찰은 박종철에게서 당시 민주위 사건으로 수배 중인 박종운의 소재를 자백받으려 물고문을 했고 그 과정에서 박종철이 사망했다. 박종철 사망 뒤 경찰은 처음에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쓰러졌다”고 발표했다가, 부검 결과 온 몸에 고문 흔적이 분명하게 나타나자 결국 19일 경찰관 두 명이 박종철에게 물고문을 하여 사망했다고 시인했다. 정부는 다음날 내무부 장관과 치안본부장을 경질했다. 하지만 이 정도 수습책으로 박종철 고문치사에 대한 학생들의 분노를 잠재울 수는 없었다. 1월 20일 서울대에서는 ‘고(故) 민주 투사 박종철 학우 추모제 및 살인 정권 타도를 위한 쫓겨 대회’가 열렸다. 27일 재야 단체를 중심으로 ‘고(故)박종철국민추도위준비위원회’를 발족하여 박종철의 49제인 2월 7일 대규모 추모제를 명동성당에서 열기로 하였다. 2월 5일 관악 캠퍼스에서 학생 약 400여 명이 모여 총학생회 주최로 쫓겨 대회를 했고, 교수 100여 명도 이날 밤 9시까지 연구실을 지키며 박종철을 애도하는 의식을 가졌다. 비록 2월 7일 추모제는 경찰의 원천 봉쇄로 열지 못했으나 학생들은 시내 곳곳에서 산발적인 시위를 벌였다. 2월 26일에 열린 졸업식에서 학생들은 박종철을 추모하는 상장(喪章)을 만들고 리본을 달고 시위를 벌였으며, 문교부 장관이 축사를 낭독하자 졸업생 대부분이 일제히 야유를 보내며 퇴장하였다.

전두환 정권의 4·13 호헌조치는 박군 고문치사를 계기로 불붙기 시작한 학생과 국민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었다. 이 조치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바라던 국민의 강력한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였다. 5월 1일 서울대 교수 122명이 시국 선언문을 발표하여 정부의 호헌 조치를 정면으로 반박하였다. 총학생회도 5월 7일 교수들의 시국 선언문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민 각 계층에서 ‘호헌 철폐’의 요구가 봇물 터진 듯 쏟아졌다. 그런데 5월 18일 명동성당에서 거행한 ‘5·18 희생자 추모 미사’에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은 경찰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을 조작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고문에 참여한 경찰의 수가 훨씬 많았고 사건 은폐에 경찰 수뇌부까지 깊숙이 개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동안 쌓인 학생과 시민의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하였다. 5월 25일 총학생회는 무기한 수업 거부와 단식 농성을 하기로 결정했다. 5월 27일 학생 8천여 명은 29일까지 동맹 휴업을 할 것을 결의한 뒤 2천여 명이 신림동까지 나가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이후 시위는 각 대학교로 퍼져나갔고, 6월 9일 연세대생 이한열이 시위 도중 최루탄을 맞고 의식 불명에 빠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1987년 6월 10일 전국 각지에서 ‘박종철 고문 살인 은폐 조작 규탄 및 민주 헌법 쟁취를 위한 범국민 대회’가 열렸다. 서울대생 5천여 명도 아크로에서 출정식을 갖고 시청, 한국은행, 서울역, 청계천 등을 옮겨 다니며 밤늦게까지 시위를 벌였다. 전국 22개 도시에서 24만 명이 참여한 이날 시위는 학생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특히 6월 11일부터 26일까지 명동성당 부근에서 연일 시위가 이어졌는데, 점심 시간을 이용하여 거리에 나온 회사원 등 ‘화이트칼라’ 계층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6월 19일 학교 당국이 조기 방학을 결정했지만, 이에 맞서 학생 1만여 명은 아크로에서 집회를 갖은 뒤 스크림을 짜고 교내 시위를 벌였다. 또한 자연과학대학 학생을 중심으로 5천여 명은 도서관을 점거하고 그중 2천여 명은 철야 농성을 했다. 6월 26일 2천여 명의 학생이 아크로에서 출정식을 갖고 서울역과 서부역 등 도심으로 진출하여 최루탄을 난사하는 경찰에 맞서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성난 학생과 시민의 저항에 직면한 전두환 정권은 6월 29일 노태우 민정당 대통령 후보가 직선제 개헌 등 8개 항의 시국 수습 방안(6·29 선언)을 발표하여 일단 백기를 들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타오르기 시작한 6·10 항쟁이 학생과 시민의 참여로 직선제 개헌이라는 큰 열매를 맺은 것이다. 학생 운동은 6·10 항쟁을 통해 4·19 혁명 이후 다시 한 번 값진 승리를 거뒀다.

6·10 항쟁 과정에서 학생회는 학생들의 분출하는 민주화 의지를 담은 그릇이었다. 6·10 항쟁에서 분출한 학생들의 민주화 의지는 이전의 협소한 투쟁 조직 체계나 몇몇

활동가 조직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컸다. 이를 수렴할 수 있는 기구는 오직 학생회밖에 없었다. 실제로 6·10 항쟁에서 대다수 학생은 학생회 깃발 아래 모여 엄청난 규모의 대중적 학생 운동을 전개하였다. 6·10 항쟁에서 학생회가 큰 위력을 발휘하자 각 학생 운동 진영은 학생회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이제 학생회는 학생 운동의 중심 기구가 되었다. 1984년 학생회 부활과 함께 기반을 마련한 대중적 학생 운동은 6·10 항쟁을 통해 활성화되었다.

학생회를 중심으로 한 대중적 학생 운동의 강화에서 중요한 매개는 각 학과 단위로 만든 학회였다. 학생회를 처음 재건하던 때부터 학생회와 학과 단위 학회는 학생 운동의 대중적 확산이라는 흐름 안에서 밀접한 관련을 맺었다. 학생회는 학회를 기초로 학생 운동 담론을 유통시키면서 과 공동체를 만들 수 있었다. 학회 또한 학생회의 도움을 받아 안정적인 재생산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1980년대 후반 신입생의 80% 이상이 학과 단위 학회에서 변혁 이론이나 비판적 사회 인식을 얻었다. 학회는 학과 선후배와 동기의 인간적 친밀감을 바탕으로 학생회 활동과 대중적 학생 운동을 수행하는 기초 단위였다. 그래서 1990년대 전반기에는 학회를 “진보적 학습을 매개로 한 생활 공동체”라고 정의하기도 했다.

1985년 총선과 1987년 6·10 항쟁을 거치면서 학생 운동 진영이 복잡하게 나뉘는 가운데, 각 학생 운동 진영은 학회와 별도로 ‘언더 학습팀’을 만들어 활동가를 재생산했다. 독자적인 재생산 구조가 없는 정파는 일반 학회를 활동가 양성 통로로 이용하였다. 1980년대 말 학습 체계를 살펴보면, NL 진영은 1학년을 대상으로 ‘사상 서클’을, PD 진영은 ‘팀’이라는 이름의 학습 조직을 운영했다. 사상 서클은 주로 1학년 교양에 치중하고, 팀은 대개 학회 교사와 과 학생회 집행부원을 배출하는 데 치중했다. 사상 서클과 팀 체계는 1992년까지 존속했으며, 학생회와 학회가 약화하기 이전인 1990년대 중반까지도 유사한 학습 체계를 정파별로 지속했다. 이러한 학습 체계는 학생 운동이 대중화하는 가운데 각 학생 운동 진영이 조직을 재생산하는 방식이었다.

##### 5) 통일 운동과 1991년 5월 운동

학생회가 대중적 학생 운동의 중심 기구가 되면서 각 대학교 학생회의 연대 기구도 속속 만들어졌다. NL 진영을 중심으로 1987년 5월 8일 결성한 ‘서울지역대학생대표자

협의회' (이하 서대협)는 비록 협의체 수준에 불과했지만, 1986년 건대 사태 이후 침체한 학생 운동을 다시 활성화해 6·10 항쟁에서 큰 역할을 했다. 6·10 항쟁 이후 NL 진영은 8월 19일 전국적 학생회 연대 조직인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이하 전대협)를 건설하였다. 반면 CA 진영은 반합법 학생 지도 조직인 '민족민주투쟁학생연맹' (이하 민민학련)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각 학생 운동 진영은 직선제 개헌 이후 치른 1987년 대통령 선거에서 서로 입장이 달랐다. NL 진영은 서대협을 앞세워 김대중 후보를 지지하였다. 그러나 선거 막바지에는 서울대 NL 좌파(비주사 NL)를 중심으로 김대중-김영삼이 단일화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CA 진영은 '경인지역 민민학련' 이 백기완 후보를 민중 후보로 추대하였고 여기에 서울대 NL 좌파 일부가 가담하였다. 하지만 선거 결과 야권의 분열로 민정당의 노태우 후보가 승리하였다. 6·10 항쟁의 승리에 도취한 학생 운동 진영은 큰 충격을 받고 침체에 빠졌다. 6·10 항쟁이 민족, 민주, 민중이라는 학생 운동의 이념을 담지 못한 채 정치권의 타협 속에서 직선제 개헌 정도로 마무리되었을 때부터 이러한 결과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1988년 통일 운동을 계기로 학생 운동은 1987년 대통령 선거 패배의 충격에서 벗어났다. 통일 운동은 1988년 3월 총학생회 선거에서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당시 NL 진영의 총학생회장 후보로 출마한 김중기는 "김일성대학 청년 학생에게 드리는 공개 서한"이란 제목의 유세 연설을 통해 남북 학생이 함께 국토 종단 순례 대행진을 하고, 서울대학교와 김일성대학교 학생이 함께 체육 대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비록 당시 총학생회 선거는 CA 진영과 NL 좌파 연합 후보가 승리하였지만, 이 선거를 계기로 NL 진영은 본격적으로 통일 운동을 전개하였다. 1988년 5월 14일 명동성당에서 연 '광주 민중 항쟁 계승 5월제'에 참가한 조성만(화학과 2학년)이 "공동 올림픽 개최", "미제 축출", "조국 통일"을 외치며 과도로 복부를 찌른 뒤 투신하였다. 조성만의 자결 투신은 막 시작한 통일 운동의 기폭제 역할을 하였다. 6월 10일 전대협은 김중기를 단장으로 하는 '6·10 남북학생회담대표단'을 구성하고 북한 학생과 학생 회담을 하려 했다. 그러나 노태우 정권은 학생들이 판문점으로 가는 길을 원천 봉쇄하였다. 전대협은 8월 15일 다시 회담을 시도하였지만 역시 정부의 봉쇄로 실패하였다.

1988년 2학기 통일 운동은 '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 운동'으로 전개되었다. 1988년 2학기 총학생회 선거에서 승리한 NL 진영은 9월 9일 아크로에서 '단독 올림픽 개최 및 휴교 음모 분쇄를 위한 전체 학생 총회'를 개최하였다. 88올림픽 개막을 하루 앞둔 9월

16일에도 아크로에 1천여 명의 학생이 모인 가운데 '매국적 단독 올림픽 규탄 및 휴교 음모 분쇄를 위한 관악 학우 2차 결의 대회'를 열었다. 통일 운동의 열기는 1989년에도 여전했다. 3월 문익환 목사의 방북과 7월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 임수경의 '평양 세계 청년 학생 축전' (이하 평양축전) 참가는 사회 전반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다. 서울대 생도 6월부터 평양축전 관련 집회를 자주 열었다. 6월 1일 총학생회 주최로 '제3회 단대 대항 체육 대회 및 평양축전 대표 선수 관악 선발전'을 열었고, 같은 날 음악대학 학생회 주최로 '축전 준비 기금 마련 통일 음악제'를 열었다. 7월 27일에는 '통일 천사 임수경 환영 대회'를 열었다. 이날은 약 200여 명밖에 모이지 않았지만 경찰은 노태우 정권 출범 이후 최초로 학교 안에 진입했다.

통일 운동이 뜨겁게 전개되었지만 학생 운동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점점 커졌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학생 운동 세력인 PD(민중민주) 진영이 등장하였다. 1988년 CA 진영이 다수파와 소수파로 분열하고 그 다수파가 1989년 초 NL 진영에 흡수되었다. 이러한 CA 진영의 자기 해체 이후 새롭게 PD 진영이라는 학생 운동 세력이 등장하였다. PD 진영 안에는 매우 다양한 정파들이 있었는데 주요 정파는 모두 서울대에서 만들었다. PD 진영은 분단 모순보다 자본주의의 모순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민족 문제보다 계급 문제를 우선시했다. 이러한 입장에서 PD 진영은 NL 진영의 통일 운동이 반공 이데올로기 극복과 노태우 정권 비판에 있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이나, 당시 한창 진행 중인 노동자 파업 등 기층 민중의 생존권 투쟁과 어떠한 연관도 맺지 못했다고 비판하였다. 한마디로 NL 진영의 통일 운동은 "정세 돌출적"이라는 비판이었다. 이러한 비판의 결과 1989년 가을 총학생회 선거에서 PD 진영은 NL 진영을 누르고 승리하였다.

1980년대 후반 통일 운동이 활성화하고 노동자들이 파업을 계속하자 노태우 정권은 1989년부터 '공안 정국'을 조성하여 이 운동들을 탄압하였다. 특히 1990년 1월 3당 합당으로 거대여당 민자당을 만든 뒤 학생 구속이 급증하고 학생 운동에 대한 규제가 강해졌다. 이에 학생들은 1990년 5월 8일과 9일 '노동 운동 탄압 분쇄와 민자당 타도를 위한 동맹 휴업'을 벌였다. 민자당 전당 대회 당일인 5월 9일에는 아크로에서 학생 4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민자당 분쇄를 위한 가두 출정식'을 갖고 도심으로 진출하여 격렬한 가두시위를 벌였다. 이날 시위는 6·10 항쟁 이후 최대 규모였다. 1990년 2학기에는 윤석양 이병의 '보안사 민간인 사찰' 폭로가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당시 보안사 사찰 대상인 서울대생은 사회과학대학 125명, 인문대학 93명, 공과대학 48명, 사범대학 29명, 자연과학대학 18명 등이었고, 학번별로는 73학번부터 86학번까지 다양

했다. 폭로한 보안사 문건은 학교 안에 실제로 ‘프락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1991년 4월 26일 발생한 명지대생 강경대 사망 사건은 공안 정국 조성 이후 수세에 몰리던 학생 운동이 다시 폭발적으로 분출하는 계기가 되었다. 강경대는 시위 도중 경찰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맞아 숨졌다. 이 사건이 알려진 뒤 서울대생 300여 명은 녹두거리에서 경찰과 투석전을 벌이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총학생회는 5월 1일 아크로에서 학생 2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살인폭력정권노태우퇴진과 전투적민중연대를 위한 총력투쟁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5월 9일 학생들은 전면 휴업을 결의하고 아크로에 7천여 명이 모여 ‘민자당 해체와 공안 통치 종식을 위한 결의 대회 출정식’을 했다. 이날 전국적으로 145개 대학이 동맹 휴업을 하고 노동 현장 100여 곳이 파업했다. 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죽음으로 노태우 정권에 저항했다. 4월 29일 박승희(전남대), 5월 1일 김영군(안동대)이 분신하는 등 4월부터 6월까지 무려 20여 명의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5월 25일에는 성균관대학교 김귀정이 시위 도중 토끼몰이식 진압 때문에 압사했다.

1991년 5월은 1987년 6월 이후 학생 운동이 가장 격렬하게 벌어진 시기였다. 그러나 ‘김기설 유서 대필 사건’과 1991년 6월 3일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일어난 ‘정원식 총리 밀가루 사건’은 과격한 학생 운동과 학생들의 분신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확산시켰다. 1991년 5월 학생 운동은 1987년 6월과 달리 국민 지지를 받지 못한 채 얼마 못 가 침체하기 시작했다. 학생 운동이 침체한 다른 원인 가운데 하나는 사회주의권 몰락이었다. 학생 운동이 주요한 대안으로 삼던 사회주의권이 몰락하자 학생 운동 진영은 물론 학생들 전반에서 많은 혼란이 일어났다. 대안이 사라진 상태에서 누구도 학생 운동의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다. 1992년 총선과 대선에서 NL 진영은 김대중 후보를 지지하였고 PD 진영은 백기완 후보를 지지하였다. 하지만 선거에 임하는 학생 운동의 역량은 이미 많이 약화된 상태였으며 1987년과 같이 1992년에도 학생 운동 세력은 선거에서 패배하였다. 한마디로 ‘1991년 5월 운동’이 좌절한 뒤 학생 운동은 위기를 맞이하였다. 이에 각 학생 운동 진영은 학생 운동의 대중성을 더욱 강화하여 학생 운동의 위기를 돌파하고자 했다.

## 6) 공개적 학생 정치 조직의 등장과 5·18 학살자 처벌 운동

1991년 5월 운동이 좌절한 이후 학생 운동이 위기를 맞이하자 학생 운동 진영은 위기



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무엇보다 학생 운동을 더욱 대중화해야 했다. 이를 위해 크게 두 가지 방안을 시도했다. 하나는 학생회가 정치 사업보다 학생 복지와 같은 학내 사업에 중심을 두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과격한 학생 운동을 자제하면서 학생회와 완전히 다른 학생 정치 조직을 공개적으로 구성하는 것이었다. 전자는 '생활 학생회론', '네트워크 학생회론'으로 구체화했다. 후자는 각 정파가 학생회와 분리한 학생 정치 조직을 공개적으로 결성하여 정치 조직의 정치 활동과 학생회의 대중 활동을 함께 강화하려는 시도로 이어졌다.

공개적 학생 정치 조직으로 처음 등장한 것은 1992년 5월 발족한 '진보학생연합'(이하 진학련)이었다. 진학련은 PD 진영의 한 정파인 '민중당 청년학생위원회'가 민중당 해산 직후 결성한 조직이었다. 이들은 학생 운동과 학생 사이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중 조직과 정치 조직을 나누어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 사업은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정당이나 학생 정치 조직이 전담하고, 대중 조직인 학생회는 학생들의 이해관계와 관련한 활동만 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전까지 비합법, 지하 조직을 통해 은밀하게 활동하면서 배후에서 학생회를 도구로 이용한 여러 학생 운동 정파는 진학련의 '대중 조직-정치 조직 분리론', '공개 학생 정치 조직 건설론'에 큰 충격을 받았다. 다른 학생 운동 세력들은 대부분 진학련의 주장을 개량주의라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이후 그들도 진학련처럼 학생회와 별개의 공개 학생 정치 조직을 속속 만들었다. 각 학생 정치 조직은 스스로의 위상을 다양하게 정의했지만 실질적으로 비슷한 활동을 벌였다.

1990년대 서울대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학생 정치 조직은 1993년 10월에 결성한 '21세기진보학생연합'(이하 '21세기')이었다. 서울대 NL 진영의 다수파이던 NL 좌파와 PD 진영의 주요 정파이던 'AP'(반제반파쇼) 세력이 함께 결성한 '21세기'는, 진학련의 문제의식을 그대로 계승하면서 과격한 학생 운동과 NL-PD 대립 구도의 극복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들은 1994년에 진학련과 통합했다. 이들은 생활 학생회론, 네트워크 학생회론 등을 주장하면서 정치 사업보다 학생 자치 활동에 더 주력하였다. '21세기'는 1993년, 1994년, 1996년, 1998년, 2000년 총학생회 선거에서 승리하였다. '21세기'와 더불어 1990년대 서울대 학생 운동의 한 축을 담당한 조직은 PD 진영의 'AMC'(반제반독점) 세력이 결성한 '대장정학생연합'(이하 '대장정')이었다. 'AP'와 함께 서울대 PD 진영의 주요 정파이던 'AMC'는 1993년 공개적 학생 정치 조직 '대장정'을 건설하였다. 'AP'가 '21세기'로 재편한 뒤 '대장정'은 서울대 PD 진영의 다수파로 활동했다.

‘대장정’은 1995년 가을 총학생회 선거에서 승리한 뒤 1997년, 2001년, 2004년 총학생회 선거에서 승리하였다. 또 2003년 ‘21세기’가 해체한 뒤 서울대에서 가장 큰 학생 운동 세력으로 지금까지 남아 있다. 1992년 대선 과정에서 AMC를 이탈한 PD 진영의 일부 세력들이 중심이 되어 1993년 ‘전국학생연대’(이하 학연)라는 학생 정치 조직을 결성하였다. ‘학연’은 비록 서울대에서 ‘21세기’와 ‘대장정’에 밀려 총학생회 선거에서 한 번도 승리하지 못했지만, 1999년 전국 단위 학생회 연대체인 ‘전국학생회협의회’(이하 전학협)를 조직할 정도로 세력을 확장하였다. 반면 이전까지 서울대 학생 운동을 주도하던 NL 진영은 다수파이던 NL 좌파가 이탈하고 1995년 ‘자주대오’와 ‘애국청년선봉대’로 분열하여 서울대 학생 운동에서 주도권을 상실하였다. 그 밖에도 1990년대 서울대에는 과거 CA 진영의 민민학련을 계승한 ‘젊은벗’, 학연에서 이탈한 ‘노나매기’ 등 군소 학생 정치 조직이 존재하였다.

문민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 치른 1993년 서울대 총학생회 선거에서는 새롭게 등장한 공개적 학생 정치 조직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 선거에 무려 5개 선거 운동 본부(이하 선본)가 출마하였다. 한 선본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 선본은 ‘21세기’, ‘대장정’, ‘학연’, ‘NL’이었다. 선거 결과 1위는 ‘21세기’, 2위는 ‘대장정’이었다. 이후 서울대 총학생회 선거는 적게는 4개 선본이, 많게는 7개의 선본이 출마하였다. 학생회 선거는 학생 정치 조직이 경쟁하는 무대였다. 대중적 학생 운동에서 학생회의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에 학생 정치 조직은 학생회를 장악하여 자신의 노선을 대중적으로 관철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학생 정치 조직이 학생회 선거 승리에 지나치게 집착하면서 학생들 표를 얻기 위해 비현실적인 공약을 남발하고 다른 조직을 감정적으로 비방하는 등 부작용이 컸다. 또한 2학기가 되면 모든 학생 정치 조직이 학생회 선거 준비에만 집중하여 학내 문제를 넘어서는 정치 사회 문제에 거의 신경을 쓰지 않는 역편향이 생겼다. 처음에 학생 정치 조직은 학생회와 다른 학생 정치 조직을 공개적으로 결성하여 학생회의 대중성과 학생 정치 조직의 정치 역량을 함께 강화하려 하였다. 그러나 학생회를 대중 동원과 자파 활동의 도구로 생각하는 경향을 버리지 못하여 학생회 선거에 집착했다. 그 과정에서 학생 정치 조직의 정치 활동은 학생회 선거 준비 활동으로 축소되었고, 학생회 활동은 대중 활동과 정치 활동 사이에서 균형을 잡지 못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 그 결과 1993년의 경우 대규모 가두시위를 거의 벌이지 못했다. 1994년에는 ‘우루과이라운드’, ‘지하철 파업’ 문제로 이전과 같은 가두시위가 몇 차례 있었지만, 1994년 북한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조성된 ‘신공안 정국’은 학생 운동의 입지를 더욱 좁혔다.

하지만 1995년에 들어와 학생 운동은 '5·18 학살자 처벌 운동'을 통해 다시 큰 힘을 발휘했다. 1995년의 5·18 학살자 처벌 운동은 1994년 가을 선거 당시 각 학생 정치 조직이 보인 행태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했다. 1994년 가을 총학생회 선거도 전년도와 같이 여러 학생 정치 조직에서 선본을 꾸려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선거 기간 동안 1980년 5·18 광주 항쟁 학살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 문제가 사회적인 쟁점으로 떠올랐지만 검찰은 이 문제를 소극적으로 다루었다. 당시 각 학생 정치 조직은 학생회 선거에만 집중하는 바람에 이 문제를 거의 신경 쓰지 않았다. 이때 도서관에서 한 고학번 학생이 5·18 광주 항쟁 학살 책임자 처벌과 선거에 빠진 학생 정치 조직의 각성을 촉구하는 대중 연설을 했다. 이 사건은 학생회 장악에만 몰두하던 학생 정치 조직에 큰 충격을 주고 그동안 외면한 정치 문제를 돌아보게 했다.

1995년 7월 18일 검찰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결국 5·18 광주 항쟁 학살 책임자들을 불기소하기로 결정하자, 1994년 가을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학생들은 학생회를 중심으로 강력한 운동을 전개했다. 먼저 8월 29일 교수 228명이 검찰의 불기소에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9월 14일 학생들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에서 '5·18 총궐기'를 결의하였다. 이후 각 학과 학생회에서 학생 총회를 개최하여 시국 선언서 발표와 삭발식 등을 했다. 여기에는 대학원생까지 적극 호응하였다. 9월 29일 아크로에서 문민정부 출범 이후 최대 인원인 3천여 명의 학생이 모여 '5·18 학살자 처벌과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집회를 갖고 도심으로 진출하여 다른 대학교 학생 2만여 명과 함께 격렬한 가두시위를 벌였다. 동시에 29일과 30일 이들 동안 학생들은 동맹 휴학을 했다. 이후 잠시 소강 상태에 들어간 5·18 학살자 처벌 운동은 10월 19일 국회에서 노태우 전(前) 대통령의 비자금 문제가 드러나면서 다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11월 3일 총학생회는 아크로에서 6백여 명의 학생이 모인 가운데 '5·18 특별법 제정과 학살자와 부정 축재자 처벌을 위한 범서울대인 결의 대회'를 가졌고, 이후 다른 대학교 학생 5천여 명과 함께 격렬한 가두시위를 벌였다. 또한 1995년 가을 총학생회 선거에서 모든 선본이 선거 운동과 5·18 학살자 처벌 운동을 함께 전개하였다. 결국 11월 24일 김영삼 대통령이 5·18특별법 제정을 지시하여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처벌하게 만드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1990년대에 들어와 학생 운동의 위기가 공공연하게 논의되는 가운데 학생 운동 진영은 학생 운동의 대중성을 강화하여 위기를 돌파하려 했다. 학생회론의 등장과 공개적 학생 정치 조직 결성은 모두 학생 운동의 대중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일어났다. 정치 조직-대중 조직 분리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생회를 도구로 인식하던 학생 정치 조직들은 자신의 정치 활동을 학생회를 통해 극대화하려 했다. 학생 정치 조직들은 정치 활동의 목표를 학생회 선거 승리에 한정했고 학생회와 다른 독자적인 정치 활동을 창출하지 못했다. 학생들의 표를 얻기 위해 학생 정치 조직들이 비현실적인 복지 공약을 남발하면서 민족, 민주, 민중이라는 학생 운동 이념은 점차 퇴색했다. 반면 학생회를 학생들보다 학생 정치 조직의 의도에 따라 운영하면서 선거 때 제시한 공약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정치 활동과 대중 활동 사이에서 극단적인 편향을 반복했다. 그 결과 학생들은 학생 운동을 주도한 학생 정치 조직과 학생회에 대해 염증을 느꼈다. 이는 1990년대 중반부터 학생회 선거 투표율이 급격하게 하락한 데서 잘 드러난다. 그런 의미에서 1995년 5·18 광주 학살자 처벌 운동은 예외적인 사례였다. 5·18 광주 학살자 처벌 운동은 대중적 학생 운동의 전형을 보여줬다. 각 학과 단위로 조직한 학생 총회는 뜨거운 열기 속에서 학생 대중의 참여를 이끌어냈고, 학생들의 정치적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진행된 운동은 일반 시민에게도 큰 호응을 받았다. 대중적 학생 운동에서 중요한 것은 조직 형태나 활동 방식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참여와 정치적 공감대 형성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전반기 내내 학생 운동의 대중성은 조금씩 약해졌다. 결국 1996년 ‘한총련 사태’를 계기로 대중적 학생 운동은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

## 제 4 절 학생 운동의 다양화와 새로운 전망(1996~2006년)

### 1) ‘한총련 사태’와 정치 운동의 약화

1990년대 들어 사회 민주화의 진행, 동구권 몰락, ‘신세대’ 학생의 등장으로 학생 사회는 크게 변하였다. 대중적 공감대 속에서 진행하던 기존의 정치 중심 학생 운동은 학생 사회가 변하자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웠다. 학생 운동 세력들은 대중적 학생 운동의 위기를 타개하고자 노력했으나 학생들은 학생 운동을 점차 외면했다. 오히려 기존의 관성을 벗지 못한 채 정치적 사안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학생 운동에 대해 학생들은 거부감을 가졌다. 1990년대 후반 학생 운동은 학교 안팎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1996년 일어난 ‘한총련 사태’는 민족, 민주, 민중을 지향하는 정치 중심의 대중적 학생 운동이 붕괴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전대협을 계승하여 1993년 건설한 ‘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이하 한총련)은 전국 단위 학생회 연대체였다. 한총련은 산하에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이하 서총련) 같은 지역 단위 학생회 연대체를 두고 전국 모든 대학교 학생회를 포괄하였다. 한총련은 NL 진영이 주도하였기 때문에 NL 진영이 상대적으로 약했던 서울대 학생 운동은 한총련 활동과 어느 정도 거리가 있었다.

1996년 3월 29일 ‘교육 재정 확보와 김영삼 대선 자금 공개를 위한 서총련 총궐기’에서 연세대생 노수석이 사망했다. 시위 중 학생이 사망했다는 소식에 많은 학생들이 거리로 뛰쳐나왔고 ‘1991년 5월 운동’ 때처럼 학생들의 항의 분신이 이어졌다. 그러나 이미 학생 운동의 대중성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황에서 운동의 열기는 오래 이어지지 못했다. 곧이어 치른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집권 여당이 승리하였다. 김영삼 정권은 학생 운동의 대중성이 약화된 상황을 이용하여 강경하게 학생 운동을 탄압하였다. 정권의 공세에 직면한 학생 운동 세력도 더욱 격렬하게 저항했다.

1996년 8월 일어난 한총련 사태는 김영삼 정권과 학생 운동 세력들이 정면충돌한 사건이었다. 8월 12~13일 한총련 주류인 NL 진영은 연세대학교에서 ‘제6차 범청학련 통일 대축전’과 ‘제7차 범민족 대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이를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공권력을 투입해 집회를 막았다. 연세대학교 주변에서 학생과 경찰이 공방을 계속했다. 경찰은 집회 참여 학생을 학교 안에 고립시키기 위해 연세대학교를 봉쇄하였고, 8월 20일 병력을 투입하여 학생 5,500여 명을 연행하고 그중 462명을 구속했다. 정부는 한총련 사태를 계기로 NL 진영은 물론 모든 학생 운동 세력을 친북, 좌경, 폭력 세력으로 매도하였다. 대다수 학생도 한총련의 과격한 학생 운동을 비난했다.

한총련 사태 이후 수세에 몰린 학생 운동은 1997년 ‘제5기 한총련 출범식’ 과정에서 프락치로 추궁받던 한 젊은이가 사망하는 사건으로 도덕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 1997년 한총련 출범식 이후 정부는 한총련을 이적(利敵) 단체로 규정하고 그 동안 당선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한총련에 소속한 각 대학 학생회장을 전원 사법 처리하기로 했다. 그 결과 서울대도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많은 단과대학 학생회장이 구속되었고, 한총련 탈퇴를 약속한 뒤에야 풀려났다. 대중적 학생 운동의 기반이던 학생회는 학생회장 당선이 곧 수배와 구속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속에서 점차 힘을 잃었다. 정부는 한총련 이외에도 여러 학생 정치 조직을 이적 단체로 규정하여 핵심 학생을 구속하였다. 이런 조직 사건에 서울대생도 다수 연루되었다.

서울대 학생 운동 세력의 다수는 한총련 주류와 거리가 있었지만, 한총련 사태는 서울대 학생 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 먼저 한총련 사태 직후인 1996년 9월 13일 서총련 투쟁 선포식이 진행 중이던 서울대 아크로 상공에 경찰 헬기가 나타나서 최루액을 살포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불과 4백여 명의 집회 참가자를 연행하려고 4천5백여 명의 경찰이 교문 주위를 포위했으며, 무려 4대의 경찰 헬기가 집회를 해산하기 위해 공중에서 최루액을 난사했다. 학교 당국 역시 도서관과 매점, 식당을 폐쇄하면서 학생들을 밖으로 내몰았다. 경찰과 학교 당국의 이러한 과잉 행동에 이 집회에 별 관심이 없던 일반 학생까지 격분하였다. 이에 9월 20일 서울대생 3천여 명은 아크로에서 학생 총회를 갖고 정부를 강력히 비판하는 시국 선언문을 채택했다. 그러나 이 학생 총회가 한총련 사태 이후 붕괴하기 시작한 대중적 학생 운동을 되살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후 아크로에는 지금까지 이러한 수가 모인 적이 없다.

서울대 학생 운동 세력은 학생 운동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정부 비판과 함께 한총련의 폭력적 운동 방식과 비민주적 운영에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대는 한총련 주류인 NL 진영의 세력이 약했기 때문에 한총련에 비판적인 목소리가 이전부터 상당히 강했다. 1997년 총학생회를 운영하고 있던 21세기진보학생연합(이하 '21세기')은 학생 운동의 과도한 전투성과 폭력성을 비판하면서 '비폭력 직접 행동'을 주장했다. 온건한 방식의 운동과 개인의 능동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비폭력 직접 행동은, 문제 제기는 유의미했으나 실내용이 애매하고 학생 운동의 폭력성을 과도하게 부각시켰다는 비난을 받았다. 1998년 상반기에는 한총련 문제를 논의하려고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를 3번이나 열었다. 당시 PD 진영 학생 정치 조직 '대장정'이 운영하던 총학생회는 한총련의 사상적 낙후성, 조직 운영의 비민주성과 폐쇄성을 비판하고, 한총련의 변화를 위해 한총련 하위 조직인 서총련 혁신안을 임시 전학대회에서 통과시켰다. 그러나 서총련은 서울대의 혁신안을 거부하고 대의원 대회를 파행으로 진행했다. 결국 1998년 5월 20일 서울대 총학생회는 임시 전학대회에서 서총련 불신임을 의결하여 사실상 한총련을 탈퇴했다.

서울대 학생 운동의 한총련 비판은 한총련과 다른 새로운 전국 단위 학생회 연대체 구성으로 이어졌다. 여기에는 PD 진영이 앞장섰다. 1997년 10월 '대장정'을 중심으로 '전국학생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출범하였고, 1999년 3월 학생연대를 중심으로 '전국대학생협의회'(이하 전학협)를 결성하였다. 연대회의는 한총련 개혁에 초점을 맞췄지만, 전학협은 "반(反)한총련"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한총련과 날카롭게 대립하였다.

이 두 조직은 서울대를 넘어서는 전국 단위 조직이지만 조직의 결성과 운영에서 서울대생의 역할이 컸다.

서울대 학생 운동이 한총련을 비판하긴 했지만 정치 중심 학생 운동이 약해진 것은 서울대도 예외가 아니었다. 정치 중심 학생 운동이 약해지면서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났다. 첫째, 학생 운동 세력 간의 분열이 깊어졌고, 둘째, 학생 운동에 대한 학생들의 거부감이 커졌다. 이러한 양상은 서울대 학생 운동을 더욱 위기에 빠뜨렸다.

먼저 1990년대 전반 공개적 학생 정치 조직이 등장하면서 분명해진 학생 운동의 분열 양상은 1990년대 후반 이후 가속화하였다. 이전부터 서울대 학생 운동은 춘추전국(春秋戰國)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정파가 분열하고 공존하였지만, 한총련 사태 이후 대중적 학생 운동의 구심점이던 총학생회의 대표성이 약해지면서 분열은 더욱 심해졌다. 과거에는 다양한 정파가 총학생회 운영위원회에서 논쟁을 벌이고 여기서 결정한 사항에 따라 총학생회의 이름 아래 함께 움직였다. 안에서는 격렬하게 논쟁하고 대립해도 밖으로는 총학생회의 대표성을 인정했던 것이다. 그러나 한총련 사태 이후 총학생회의 대표성이 약해지면서 각 정파는 총학생회와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특히 1999년 가을 총학생회 선거에서 최초로 비운동권이 뽑히자 학생 운동 세력은 더 이상 총학생회의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비운동권 총학생회 역시 여러 학생 운동 세력을 포용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그 결과 운영위원회는 제대로 열지 못했고 각 학생 운동 세력은 상호 논쟁 없이 독자적으로 각개 약진했다. 분열이 심해지면서 2000년 가을 총학생회 선거에는 운동권 선본만 무려 6개가 출마하였다. 이후 운동권과 비운동권이 총학생회를 번갈아 맡았지만 총학생회는 과거와 같은 대표성을 회복하지 못했다. 대중적 학생 운동은 구심점을 잃었다.

학생 대중에게서 동떨어진 채 분열과 대립만 거듭하는 학생 운동에 대한 거부감도 커졌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1999년 4월 지하철 파업 노동자들의 서울대 농성을 둘러싼 논란이었다. 당시 구조 조정에 반대하며 파업을 한 지하철 노동자들은 정부가 공권력을 투입할 것에 대비하여 서울대로 모여들었다. 이런 일은 이전에도 흔히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많은 학생이 노동자들의 학내 진입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특히 노동자들의 장기 농성과 집회가 수업권을 침해하고 쓰레기가 생긴다며 항의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총학생회가 노동자들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불편하지만 참아 달라.”고 호소했지만, 대다수 학생은 더 이상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잠복한 갈등은 1999년 10월 ‘BK21 반대 총투표’에서 폭발했다. 총학생회는 BK21 사업을 신자유주의적 대학 재편 시도로 규정

하고 보름 내내 사업 반대를 학생들에게 호소했지만 투표율은 38%에 그쳤다. 곧이어 일부 학생들이 투표를 주도한 총학생회를 공격하면서 운동권과 비운동권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다.

1999년 가을 총학생회 선거에 출마한 비운동권 ‘광란의 10월’ 선본은 빈약한 선거 조직과 정책 공약에도 별다른 선거 운동 없이 비운동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당선되었다. 그동안 대중적 학생 운동의 기반이었던 학생 대중의 정치적 관심과 참여 의식, 그리고 친(親)운동권 정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1990년대 10년 동안 학생들 사이에 쌓여 온 반(反)운동권 정서가 드디어 폭발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더 이상 학생 운동 세력은 학생 사회의 주류가 아니었다. 과거에는 학생 운동에 참여하거나 동의하지 않은 학생이 학생 사회에서 ‘아웃사이더’ 였지만, 이제 학생 운동 세력이 학생 사회의 아웃사이더가 되었다. 이렇게 정치 중심의 대중적 학생 운동은 1990년대 후반기에 급속하게 붕괴하였다.

정치 중심 학생 운동이 약해지면서 서울대 학생 운동 구도도 변화하였다. 1990년대 학생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21세기’가 2003년 공식 해체하였다. ‘21세기’는 ‘한총련’과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다른 학생 운동 세력에 비해 온건하고 유연한 방식의 운동을 펼쳤다. 그래서 한때 ‘NL과 PD’ 구도를 넘어서는 합리적 학생 운동의 전형을 보여 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21세기’의 온건한 노선은 다른 학생 운동 세력들로부터 개량주의라는 비판을 받았고, 한총련 사태 이후 정치 중심 학생 운동이 약화하는 과정에서 조직의 방향을 잡지 못한 채 해체의 길로 들어섰다. 학생 운동 약화로 가장 온건한 학생 운동 세력이 먼저 사라졌다는 사실은 아이러니다. 한총련 반대와 ‘반(反)자본’의 급진적 노선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냈던 학생연대와 전학협도 2003년 해소하였다. 2000년대 초 급격히 세력을 확장하던 전학협은 학생 운동의 역할과 방법에 대한 노선 논쟁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해소하였다. 그 밖에 몇몇 군소 정파들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반면 진보 정당을 중심으로 여러 정파 출신의 학생이 결집한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국제사회주의자 그룹과 관계를 갖고 반제(反帝) 평화를 주장하는 ‘다함께’, 노동자 중심의 운동을 강조하는 ‘학생사회주의정치연대’, 반(反)신자유주의와 여성주의를 기치로 하는 ‘전국학생행진’ 등 다양한 정파가 서울대 학생 운동의 일원으로 새롭게 등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치 중심의 대중적 학생 운동과는 전혀 다른 경향의 학생 운동이 등장했다는 사실이다. 특히 그동안 민족, 민주, 민중이라는 이념적, 정치적 지향에 가려 학생 운동의 주요 대상이 되지 못한 여



성, 교육, 인권,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이러한 학생 운동은 과거 정치 중심 학생 운동과는 달리 학생들의 일상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며 1990년대 후반 이후 서울대 학생 운동의 중요한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

## 2) 반(反)성폭력 운동의 확산

1960년대 이후 한국 학생 운동은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정치 문제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사회 민주화가 진행되고 학생들의 탈정치 경향이 커지면서, 정치적 쟁점만을 문제 삼는 학생 운동에 대한 비판이 일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동안 정치적 거대 담론 속에서 제대로 부각되지 못하던 학생의 일상 문제가 운동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표적인 것이 성폭력 문제다. 1990년대 들어 사회적으로 성폭력을 가부장적 사회 구조의 문제이자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침해로 규정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학생들도 이러한 사회적인 흐름에 발맞춰 학교 안팎에서 반(反)성폭력 운동을 전개했다. 반성폭력 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학생회나 학생 정치 조직과 다른 독자적인 여성 운동 모임이 다수 탄생하였다.

학내 성폭력 문제는 1993년 자연과학대학 교수의 조교 성희롱 사건을 계기로 공론화했다. 소송으로 이어져 결국 유죄 판결이 난 이 사건은 학교 안팎에 많은 충격을 줬다. 이어 1996년 한총련 사태 당시 진압 경찰이 학생을 성추행한 사건이 일어나고, 1997년 약학대학 교수의 제자 성폭력 사건이 드러나면서 반성폭력 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이 사건들 이전에도 성폭력 문제를 제기한 학생들이 있었지만, 학생 운동 진영 대다수는 여성 운동, 반성폭력 운동을 부차적이고 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했다. 반성폭력 운동도 처음에는 권력의 부당한 폭력에 대한 학생들의 권리 찾기 차원에서 시작했다. 아직 일상의 가부장적 성 문화와 사회 구조에 대한 문제는 제기하지 못했다.

1990년대 후반부터 가부장적 성 문화와 사회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 차원에서 반성폭력 운동을 전개하는 학생들이 등장했다. 이 학생들을 중심으로 1996~1997년 '사회대여학생자치회', 인문대학 페미니즘 동아리 '여우방' 등 각 단과대학별, 학과별 여성 운동 모임이 꾸려졌다. 1997년 이러한 학내 여성 모임의 연대체인 관악여성모임연대(이하 관악여모)가 정식으로 발족하였다. 이후 학내 반성폭력 운동은 더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

1998년은 서울대 반성폭력 운동의 대중화와 제도화 양 측면 모두에서 중요한 해였다. 이 해에 반성폭력 운동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했다. 하나는 학생의 자치적 질서에 기반을 둔 '자치 규약 제정 운동' 이고, 다른 하나는 학교 당국과 교수를 상대로 한 '학칙 제정 운동' 이었다. 제1회 '페미니즘 문화제' 도 1998년부터 시작했다.

자치 규약 제정 운동은 공동체에서 성폭력 논의를 공론화하고 반성폭력 담론을 확산하여 성폭력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고자 한 시도였다. 자치 규약 제정 운동의 일환으로 각 단위에서 반성폭력학생회칙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졌다. 1998년 사회과학대학과 인문대학에서 각각 총투표와 '전체인문대대표자대회' (이하 전인대회) 의결을 통해 반성폭력학생회칙을 제정하였다. 자연과학대학도 총투표로 반성폭력학생회칙을 제정하려는 했으나 투표율 미달로 무산되었다.

그러나 반성폭력학생회칙을 제정했더라도 대중적인 논의와 합의 없이는 실효성을 얻기 어려웠다. 인문대학의 경우 16대 인문대학 학생회는 총투표 대신 전인대회에서 안건을 통과하고 차후에 홍보하는 방식으로 반성폭력학생회칙을 제정했다. 그런데 전인대회에서 학생회칙을 제정한 직후, 접수한 성폭력 사건을 학생회칙에 따라 처리하고 가해자의 '공개 실명 사과 자보' 를 5동 앞 '해방터' 에 게시하자 학생들 사이에서 큰 논쟁이 일어났다. 이 논쟁은 학생회칙 내용의 정당성뿐 아니라 학생 사회의 민주주의와 학생회의 대표성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졌다. 반성폭력학생회칙을 둘러싼 논쟁에서 '피해자 중심주의' 와 '실명 공개 사과' 는 뜨거운 쟁점이었다. 피해자 중심주의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판단과 처리를 피해자의 관점에서 해야 한다는 것으로, 기존의 성폭력적 담론과 구조를 해체하고 공동체 내에서 여성의 시각을 드러내기 위한 원칙이었다. 실명(實名) 공개 사과는 자신의 가해 사실을 인정한 가해자가 실명 사과문을 공개 게시하는 것으로,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한 방법이었다. 가해자가 공개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변할 것을 약속하여 공동체에 존재하는 성폭력을 가시화하고 피해자 치유에 일조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실명 공개 사과 자보를 본 많은 학생들은 피해자 중심주의를 피해자 개인의 자의적, 주관적 판단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비판하고, 실명 공개 사과를 가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또 하나의 폭력으로 인식했다.

이러한 논쟁과 학생들의 반발은 반성폭력 운동이 아직까지 큰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것을 의미했다. 이런 점에서 1998년 9월에 시작한 '성폭력 해방 공간 선언 운동' 은 반성폭력 운동에서 중요한 사건이었다. '성폭력 해방 공간 선언 운동' 은 자치 규약 제정 운동이 학생 사회에서 실효성도 없고 성폭력에 대해 생산적인 논의를 하게 하지도

못했다는 문제의식 아래, 학생이 스스로를 운동의 주체로 인식하고 행동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시도였다. 이를 위해 일상의 모든 여성 억압적 행태를 '성폭력'으로 규정하고 이를 공격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제시하며 일상을 정치 영역으로 확대시키려 했다. 성폭력 해방 공간 선언 운동은 이전까지 단과대학별로 조직한 여성 운동 모임을 학과 단위까지 확장하는 데 기여했고 이후 반성폭력 학칙 제정 운동으로 나아가는 대중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1998년 반성폭력 운동의 다른 한 축은 반성폭력 학칙 제정 운동이었다. 반성폭력 학칙을 제정할 필요성은 1993년 교수의 조교 성희롱 사건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나 반성폭력 학칙 제정 운동은 1997년부터 본격화했다. 1997년 총학생회 선거 당시 관악여모는 모든 선거 운동 본부(이하 선본)에 반성폭력 학칙 제정을 선거 공약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 결과 이 선거로 구성된 41대 총학생회는 산하에 '성정치위원회'를 만들었다. 관악여모 활동가들은 성정치위원회에 참여하여 학칙 제정 운동을 시작하였다.

1998년 8월 그 해 5월 일어난 성폭력 사건 가해자인 인문대학 학생이 자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애초에 인문대학 학생회가 신고받아 학생회칙에 따라 조사했으나 가해자가 실명 공개 사과를 거부하여 학생회칙으로 처리할 수 없게 되자 학생생활연구소 여학생부에 위임한 사건이었다. 이후 인문대학 교수 5명으로 구성된 '인문대 성관련학생 징계위원회'는 가해자에게 피해자 졸업 연도까지 무기 정학 또는 자퇴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징계를 내렸고, 결국 가해자는 자퇴를 선택하였다. 그러나 총학생회 성정치위원회는 공동체에 대한 문제 제기와 가해자 재교육 등의 조치 없이 가해자 징계에만 초점을 맞춘 교수들의 처리 방식을 비판하였다.

이어 9월에 학생생활연구소 여학생부에서 반성폭력 관련 학칙 가안 '성적괴롭힘문제 처리규정(안)', '서울대학교성문제특별위원회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성정치위원회와 관악여모는 성폭력 처리 과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교수 외 직원과 학생도 특별위원회에 참여할 것을 주장하였다. 1998년 10월 학생 대표 2명과 본부 측 대표 2명으로 구성된 학칙 제정 논의 모임이 마련되었다. 이 모임에서 1999년 2월 학칙 초안인 '서울대학교성폭력예방과처리를위한규정(안)'을 작성하였다.

1999년 4월 반성폭력 학칙 제정을 위한 활동단 '바로지금'이 결성되어 설문 조사와 공청회, 서명 운동 등을 통해 학칙 제정 논의를 대중화했다. '바로지금'의 서명 운동은 12일에서 14일까지 3일 간 4천 명이 넘는 학생이 참여하여 반성폭력 학칙 제정에 대한

학생 사회의 대중적 합의와 지지를 이끌어냈다. 서명이 끝난 뒤 관악여모와 성정치위원회는 학칙 수정안을 마련하고 본부와 구체적인 협상을 벌였다. 또한 관악여모는 학칙 수정안이 법률연구소의 심의를 거치는 1년 동안 본부 앞 집회 등을 해서 학칙의 빠른 제정을 촉구하고 반성폭력 학칙에 대한 관심을 환기했다.

결국 2000년 6월 30일 ‘서울대성희롱 성폭력예방과처리에관한규정’과 11월 관련 시행 세칙이 제정되었다. 또 12월 22일 ‘서울대 성희롱 성폭력상담소’가 학생생활연구소 안에 개소하였다. 초기에 서울대 성희롱 성폭력상담소는 예산이나 시설, 전문 인력 확보가 제한적이어서 업무를 제대로 하기 어려웠지만 2001년 9월 완전히 독립적인 부속 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성폭력 관련 규정 제정과 상담소 설치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요구하고 지속적으로 개입해 이룬 반성폭력 운동의 성과였다. 이후 다른 대학교들도 성폭력 관련 규정을 제정하였는데, 학생들이 참여하여 만든 서울대의 성폭력 관련 규정은 다른 학교 규정의 모델이 되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반성폭력 운동은 학생 운동의 중요한 흐름으로 성장했다. 각 학생 단위는 학생들과 반성폭력 담론을 공유하려고 매년 반성폭력 세미나를 꾸렸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현장 활동 등 학생 활동 대부분에서 반성폭력 교양은 필수였다. 학생회 선거에서도 여성 관련 정책은 빠지지 않았고 여성주의를 전면에 내세우는 각 단위 학생회도 늘어났다.

그러나 반성폭력 운동은 2000년대 들어 다양한 어려움에 부딪혔다. 반성폭력 운동은 학내 여성 운동 조직과 학생회의 협력 속에서 활발하게 추진되었지만, 기존 학생 운동 세력들은 여전히 반성폭력 운동이나 여성 운동을 부차적인 운동으로 간주하였다. 특히 일부 남성 활동가의 성폭력이 드러나면서 기존 학생 운동과 반성폭력 운동 사이에서 긴장이 생겼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0년 인문대학 학생회장의 성폭력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학생회장이 성폭력 가해자였을 뿐 아니라 당시 인문대학 학생회가 학생 운동 세력 중 반성폭력 운동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학교 안에 충격을 주었다. 또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인문대학 학생회가 사건을 축소하려 하면서 기존 학생 운동과 반성폭력 운동의 갈등이 커졌다. 결국 인문대학 학생회장은 자진 사퇴하였다.

피해자 중심주의와 실명 공개 사과에 대한 반발도 이어졌다. 2001년 2학기에는 1년 전 학생회칙에 따라 처리한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가 당시 자신의 가해 인정과 실명 공개 사과 자보 게시는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며 사건 전체를 부인하는 일이 일어났다. 이 일을 계기로 피해자 중심주의와 실명 공개 사과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일어났다. 성폭

력 가해자의 실명 공개 사과 자보를 게시한 법과대학과 경영대학에서도 논쟁이 커졌다. 이런 논쟁들이 기본적으로 피해자 중심주의와 실명 공개 사과에 대한 반발에서 기인했다는 점은 이전과 같았다. 그러나 성폭력을 제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률이나 학칙을 제정한 상황에서, 학생 사회 내부의 자치적 해결보다는 법리에 입각한 법적 해결 문제가 쟁점이 되었다.

2000년대 초의 이러한 상황은 이후 반성폭력 운동 방식의 변화를 불러왔다. 물론 각 단위에서 세미나나 강연회 등을 통해 반성폭력 문제의식을 공유하려는 활동은 계속되었다. 그러나 기존 학생 운동과 반성폭력 운동의 긴장, 학생 자치 활동의 위축과 학생 사회의 탈정치화는 그 이상의 실질적 움직임을 어렵게 만들었다. 또 학생의 자치적 해결보다 법적 해결을 우선시하면서 학생회칙과 같은 학생 자치 규약에 따라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사례가 줄었고, 처리하더라도 전과 같이 공개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이에 관악여모는 성폭력 문제 해결과 피해자 구제의 1차 책임이 학교 당국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성희롱·성폭력상담소의 기능을 보강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반성폭력 운동은 가해자 처리보다 피해자 치유에 초점을 맞추었다. 2001년 10월 제4회 페미니즘 문화제에서 그 동안 반성폭력 운동이 섬세하게 짚지 못한 피해자의 경험과 고통을 드러낸 것과, 11~12월 관악여모와 학내 언론사가 함께 대학 내 성폭력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그러한 취지의 시도였다.

반성폭력 운동은 2004년 여름 농활 당시 3개 단과대학 농활대가 각각 성폭력 문제로 마을에서 철수한 것을 계기로 다시 공개적인 논쟁에 휩싸였다. 이 일은 학교를 넘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켜, 자기중심적인 학생이 농민의 문화와 정서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학생 운동 세력 중 일부는 교조적인 반성폭력 운동이 선배들이 어렵게 만든 학생과 농민의 연대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렸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각 단과대학마다 성폭력 양상과 농활대의 상황이 모두 달랐기 때문에 농활과 반성폭력 운동을 단순하게 대립시킬 수는 없다. 당시 반성폭력 운동 활동가도 농활대 철수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었다. 농활대 철수 사건을 둘러싼 논쟁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다.

많은 논란이 일어나긴 했지만 반성폭력 운동은 정치 중심 학생 운동이 약화된 상황에서 학생들의 일상에 기반을 둔 학생 운동의 새로운 전형을 만들었다. 하지만 반성폭력 운동이 앞으로 넘어야 할 벽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도 성폭력을 법적 제도적 문제로 인식하면서 위축된 학생의 자치 역량을 증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피해자 중심주의와 같은 원칙이나 공개 실명 자보, 농활대 철수와 같은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하여 학생

들 사이의 소통이 필요하다. 더 많은 학생이 동의해야만 반성폭력 운동의 자치 역량을 키울 수 있다. 반성폭력 운동과 다른 학생 운동의 관계도 앞으로 반성폭력 운동이 풀어야 할 과제다. 특히 민족, 민주, 민중의 기존 학생 운동 이념과 반성폭력 운동의 관계 정립이 주목된다.

### 3) 교육 자치 운동의 활성화

한총련 사태 이후 정치 중심 학생 운동이 약해지면서, 학생 운동 세력은 사회 운동과 학생 운동의 관계를 다시금 고민하였다. 1960년대 이후 학생 운동은 사회 운동을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했지만, 1980년대 학생회 재건과 학생 운동의 대중화 과정에서 점차 그 위상이 변하였다. 특히 노동 운동과 시민 운동이 성장하면서 1990년대 등장한 학생 정치 조직들은 더이상 학생 운동이 전체 사회 운동을 선도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이들은 학생 운동의 위상이 전체 사회 운동의 일부를 차지하는 ‘부문 운동’이라고 새롭게 규정하였다. 따라서 학생 운동은 자신의 독자적인 활동 영역에 기반을 둔 새로운 운동 방향과 주제를 설정해야 했다. 하지만 여전히 학생 운동의 중심은 정치 활동이었다. 학생 운동의 독자적인 영역인 ‘교육’에 대한 관심은 학생회론 또는 학내 복지를 둘러싼 논의 정도로 한정되었다. 그러나 한총련 사태는 더 이상 과거의 관성을 지속할 수 없게 만들었다. 학생 운동의 생존을 위해 기존 학생 운동 세력도 학생 운동의 독자적인 영역인 교육 문제를 적극적으로 사고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교육과 자치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물론 교육과 자치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전반부터였다. 최초의 공개적 학생 정치 조직이던 ‘진보학생연합’ (이하 진학련)은 프랑스 1968년 혁명의 문제의식을 받아들여 대학을 비판적 지식인의 산실로 만들고자 하였다. 이들은 학생을 피교육자로 규정하는 것을 거부하고, 학생이 대학의 주체가 되어 참여와 자치에 기반을 둔 대학민주주의를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진학련은 학내 복지나 행정적인 사안의 제도화 등 교육 환경 개선에만 주목한 것이 한계였고, 구체적인 활동도 식당 문제, 공간 문제, 휴식 문제 해결 정도에 그쳤다. 무엇보다도 대학의 문제를 학생회와 학교 당국의 대립 구도로 제한해 교육과 자치의 문제를 학교 안 문제로 한정하는 경향을 드러냈다. 진학련의 문제의식은 서울대 최대의 학생 정치 조직인 ‘21세기’로 그대로 이어졌다. 반면 ‘대장정’은 ‘21세기’의 교육 자치 운동을 ‘조합주의’라고 비판하고 1990년대

중반 ‘反(반)대학’ 과 ‘서울 민중 대학(Seoul People’s University)’ 라는 급진적인 구호를 내걸고 대학의 모순을 사회 모순과 연결시키려 했다. 그러나 이들도 사회와 대학을 연결할 만한 구체적인 경로를 찾지 못하여 실질적인 실천을 하지는 못했다.

1990년대 이후, 특히 1998년 외환 위기 이후 급속히 확산된 신자유주의는 대학의 위상과 학생의 교육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었다. 무한 경쟁을 통한 효율성 극대화를 우선시하는 신자유주의는 대학 사이의 경쟁, 대학 안에서 학생들 사이의 경쟁을 강조하였다. 이제 대학은 더 이상 진리의 상아탑이나 혁명의 공장이 아니었다. 무한 경쟁의 소용돌이에서 살아남으려고 대학과 학생은 시장과 자본의 논리를 충실히 따라야 했다. 한총련 사태 이후 교육과 자치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진 것은 정치 중심 학생 운동이 약해진 결과이자 이러한 한국 사회와 대학의 변화를 그대로 반영한 결과였다. 학생 운동 세력은 학생들이 외면하는 추상적인 정치 운동보다 무한 경쟁에 내몰린 학생들의 교육권과 자치권을 옹호하는 교육 자치 운동을 더욱 구체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했다. 교육 자치 운동은 본질적으로 반(反)신자유주의 운동이었다.

본격적인 교육 자치 운동은 1997년 학교 당국이 만든 ‘면학분위기조성을 위한 학생 지도종합계획’에 대한 반대 운동에서 시작하였다. 1997년 6월에 알려진 이 계획은 이전까지 학생들이 자유롭게 하던 대자보 게시, 플래카드 설치, 장터 개설, 서명 운동 등 광범위한 학생 활동을 반드시 학교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제한하였다. 이후 학교 곳곳에서 대자보 부착이나 장터 개설, 집회 등을 둘러싸고 학교 당국과 학생들 사이의 마찰이 자주 일어났다. 결국 총학생회는 1997년 10월 2일 아크로에서 학생 총회를 개최하여 학교 당국의 방침을 비판하고 대응책을 모색하였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10월 31일에는 사범대학 학생회장 선거에 참여한 학생 100여 명이 본부를 항의 방문하였다. 단순히 학생 활동에 대한 제한을 넘어서서 ‘비운동권 학생의 역량 활성화를 위한 지원 검토’, 『대학신문』의 운동권 논리 전파 차단, ‘상습 불순 활동 및 한총련 적극 가담 동아리의 해체 및 종용’ 등의 내용을 담은 이 계획에 대해, 학생 운동 세력은 공안 정국과 신자유주의에 편승하여 학교 당국이 학생 자치권을 탄압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일반 학생들은 대체로 이 문제에 무관심했다.

1999년 BK21 반대 운동은 시장 논리로 대학을 구조 조정하려는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교육 투쟁이었다. 학생 운동 세력은 BK21 사업이 대학 간, 학문 간 서열화를 강화하면서 시장 논리에 따라 대학의 공공성을 훼손한다고 비판하였다. 1999년 10월 총학생회는 BK21 반대 운동에 학생을 결집시키려고 찬반 총투표를 하였다. 이때 대자보와

PC 통신에서 BK21 사업에 대한 논쟁이 뜨거웠지만 투표율은 38%밖에 되지 않았다. 저조한 투표율은 BK21 사업으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서울대생들이 반대 운동을 주도하는 학생 운동 세력을 불신입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곧이어 진행된 총학생회 선거에서 1984년 학생회 재건 이후 최초로 비운동권이 당선되면서 이러한 해석은 더욱 힘을 얻었다.

그러나 1998년부터 문제가 된 ‘학사관리엄정화방안’ (이하 엄정화방안)에 대한 반대 운동은 BK21 반대 운동과는 달리 학생들의 폭넓은 지지 가운데서 진행되었다. 1998년 9월 엄정화방안에 대한 학생 총투표에서 대다수 학생은 엄정화방안을 반대하였다. 이에 힘입은 총학생회는 1999년 초부터 ‘엄정화방안 반대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였다. 5월에는 총학생회가 본부를 점거하여 장기간 농성에 들어갔다. 그 결과 학교 당국은 엄정화방안을 1999년 6월 개정했다. 그러나 엄정화방안에 따른 학사 제적 논란이 이어지면서 2000년에도 천막 농성과 본부 점거 농성이 되풀이되었다. 엄정화방안에서 크게 문제가 된 부분은 상대 평가제, 재수강 시 학점 제한, 학점 2.0 이하 학사 경고, 학사 경고 4회 시 제적 조항 등이었다. 학생들은 엄정화방안이 학생들의 자율을 저해하고 학생들을 수동적으로 학점의 굴레 안에 가두어 버린다고 비난했다. 학생 운동 세력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학점의 부담에 시달리는 일반 학생들의 불만도 많았다. 하지만 학교 당국은 학생들의 경쟁력 향상을 명분으로 학사 관리를 더욱 강화했다.

1999년과 2000년 엄정화방안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은 학교 당국과 학생들은 2001년과 2002년 모집 단위 광역화(이하 광역화) 문제로 다시 한 번 충돌하였다. 2001년부터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광역화 반대 운동’이 펼쳐나갔다. 광역화 반대 운동은 199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 학부제 경험에 기반하고 있었다. 당시 자연과학대학에서 학부제를 실시할 때만 해도 저학년 때 폭넓은 공부를 하고 고학년 때 적성에 맞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학생들 사이에서 찬성 의견이 더 많았다. 하지만 실제 시행 과정에서 인기 학과에 진학하기 위해 저학년 때부터 학생들이 학점 경쟁을 벌이고, 학과별 지원자의 극심한 편차로 비인기 학과는 학과의 존립마저 위태로웠다. 무엇보다도 과 학생회를 기초로 한 학생회 체계가 과 학생회의 해체로 근간부터 흔들렸다. 이는 학생회뿐만 아니라 학생 운동까지 약화시켰다. 학생 운동 세력은 2001년부터 인문대학과 사범대학 등 다른 단과대학에서 학부제와 유사한 광역화를 추진하자 강하게 반발하였고 학생들 다수도 이에 동조하였다. 학교 당국은 학생들의 반발에 관계없이 광역화를 계속 추진하였지만, 학생들의 저항 수위는 계속 높아졌다. 2001년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총



학생회장단이 단식 투쟁을 시작했고, 17일에는 대규모 반대 집회를 아크로에서 열었다. 2002년에는 광역화 반대 운동과 등록금 인상 반대 운동을 결합하여 교육 자치 운동의 강도를 높였다. 2002년 3월 20일 총학생회는 대학본부를 점거하여 농성을 시작했다. 3월 28일에는 아크로에서 비상 총회를 열어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인 학교 당국에 대한 불신임안을 가결하고 총장실을 점거하였다. 본부와 총장실 점거 농성은 4월 8일에 끝났지만, 이 사건의 여파로 총장이 사퇴하고 총학생회장은 제적을 당하는 극단적인 결과가 나왔다. 학생들과 학교 당국의 갈등이 파국을 맞이한 것이다.

2003년과 2004년에도 학생들은 등록금 인상이나 기성회비 사용, 도서관 이용, 김민수 교수 복직 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였으나 학교 당국과 큰 마찰을 일으키지는 않았다. 하지만 2005년 교육 자치 운동은 다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교육 투쟁’을 전면 내걸고 당선된 총학생회는 1월부터 등록금 인상 반대 운동을 벌였다. 또한 각 단과 대학 학생회도 다양하게 교육 자치 운동을 벌였다. 3월에 총학생회는 각 단위에서 진행한 교육 자치 운동의 역량을 한곳에 집중하기 위해 아크로에서 비상 학생 총회를 열었다. 1,700여 명이 모인 이 자리에서 학생들은 등록금 인상분 반환, 학부 대학 및 전문 대학원 계획의 전면 재논의, 상대 평가제 철폐, 학점 취소제 쟁취, 대학운영위원회 건설 등의 주장을 채택하였다. 총회를 마친 뒤 학생 대표단은 학생처장과 면담을 하고 학생들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투쟁 수위에 불만을 품은 사회과학대학 학생들은 잠시 대학본부 3층을 점거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학생들과 학교 직원, 청원 경찰 사이에 몸싸움이 일어나 부상자가 생겨 물의를 빚었다.

2005년 하반기에는 국립대학교 법인화에 반대하는 운동이 벌어졌다. 총학생회는 10월 6일 법인화에 반대하는 ‘서울대인 행동의 날’ 집회를 갖고 집회 후 학생처장과 면담했다. 8일에는 종묘공원에서 다른 국립대학교 학생들과 연합 집회를 가졌다. 총학생회는 법인화가 교육의 공공성을 부정하는 행위이며, 그 결과 등록금이 대폭 인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직까지 법인화 반대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은 크지 않지만, 앞으로 법인화가 공식적으로 추진될 경우 등록금 인상 문제와 맞물려 큰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교육 자치 운동은 운동의 성격상 학교 당국과의 대화가 중요하다. 2002년 중반 이전까지 학생들과 학교 당국은 자주 극단적으로 대립했다. 그러나 2002년 중반 이후부터는 학생과 학교 당국의 관계가 많이 부드러워졌다. 일례로 1999년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상호 불신으로 인해 무산된 총장과 학생들의 대화가 2002년 중반 이후 성사되어 지금까지

지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도 학생 운동은 정치적 활동보다 학생들의 일상에 기반한 교육 자치 운동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하지만 ‘교육권과 자치권 수호’, ‘신자유주의에 의한 대학 개편 반대’를 앞세운 교육 자치 운동이 보수화한 오늘날 학생들에게 얼마나 많은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학생 운동 세력은 먼저 학생들의 폭넓은 동의와 지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 당국과 상호 신뢰 속에서 관계망을 구축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대화와 타협이다. 학교 당국과 학생 운동 세력들은 서로를 인정하고 공존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학교 당국은 학생들을 일방적인 학사 관리의 대상으로 무시해서는 안 되며, 학생의 의견을 존중하고 학교 측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학생 운동 세력 역시 과격한 운동 방식을 지양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가지고 학교 당국과 교섭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학내 민주주의가 꽃필 수 있다. 학교 당국, 교수, 학생들 모두 서울대의 소중한 주체들이다.

국대안을 둘러싼 학생 운동의 소용돌이 속에서 설립한 서울대학교는 지난 60년 동안 학생 운동의 선두에 있었다. 극단적인 반공 이데올로기로 인해 1950년대까지 학생 운동은 많은 제약을 받았지만, 새롭게 등장한 학생 이념 서클을 중심으로 학생 운동의 기반이 조금씩 형성되었다. 1960년 4·19 혁명으로 학생 운동은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다. 이후 학생 운동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실천하는 역할을 했다. 노동 운동이나 시민 운동 같은 사회 운동들이 성장하지 못한 상황에서 학생 운동은 사회 모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치열하게 저항했다. 그 과정에서 학생 운동은 민주, 민족, 민중을 핵심 이념으로 정립했다. 1980년대 들어 학생 운동은 보다 조직적이고 과학적인 운동을 모색했다. 그 결과 학생 운동은 학생들 사이에서 급속하게 대중화되었다. 특히 1984년 부활한 학생회는 대중적 학생 운동의 중심 기구였다. 다른 사회 운동들이 성장하면서 학생 운동의 선도성은 점차 약화되었지만 학생 대중에 기반한 학생 운동의 힘은 더욱 강해졌다. 오늘날 민주화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는 1987년 6·10 항쟁은 대중적 학생 운동이 이룬 값진 성과였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 학생 운동의 대안이었던 사회주의권이 몰락하고 사회 민주화가 진척되면서 학생 운동의 대중성은 점차 약해지기 시작했다. 학생들은 점차 학생 운동을 외면했고 적대감마저 나타냈다. 학생 운동 세력들은 대중성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기존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학생들로부터 더욱 멀어졌다. 결국 1996년 한총련 사태를 계기로 정치 중심의 대중적 학생 운동은 붕괴했다. 반면 여성, 교육, 환경 등 학생들의 삶과 직결된 다양한 영역에서 문

제를 제기하는 운동들이 성장했다. 과학 상점 운동 같이 전공에 기반한 운동이나 장애인, 동성애자,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 소수자를 위한 인권 운동도 등장했고, 김민수 교수 복직, 이라크전 파병 반대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분명한 목소리를 내는 운동도 시도되었다. 사회와 삶의 모순이 다양한 만큼 운동도 다양해진 것이다. 문제는 과거 학생 운동이 역사에 기여했듯이 오늘날 학생 운동이 어떻게 대학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가이다. 신자유주의와 보수화의 물결 속에서 많은 학생들이 비판 의식을 상실한 오늘, 학생 운동은 건강하고 균형 잡힌 대학과 사회를 만들 수 있는 희망이 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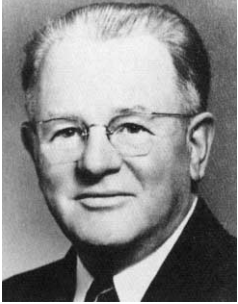


부록



# 1. 역대기관장 명단

## 총장



제1대 총장 Harry B. Ansted  
(1946.8.22~1947.10.25)



제2대 총장 이춘호  
(1947.10.25~1948.5.11)



제3대 총장 장이육  
(1948.5.12~1949.1.3)



제4대 총장 최규동  
(1949.1.4~1950.10.5)



제5대 총장 최규남  
(1951.9.3~1956.6.8)



제6대 총장 윤일선  
(1956.7.19~1961.9.29)



제7대 총장 권중휘  
(1961.12.7~1964.6.8)



제8대 총장 신태환  
(1964.6.24~1965.8.26)



제9대 총장 유기천  
(1965.8.27~1966.11.10)



제10대 총장 최문환  
(1966.11.11~1970.11.10)



제11,12대 총장 한심석  
(1970.11.11~1975.5.26)



제13대 총장 윤천주  
(1975.5.27~1979.5.26)



제14대 총장 고병익  
(1979.5.27~1980.6.29)



제15대 총장 권이혁  
(1980.6.30~1983.10.14)



제16대 총장 이현재  
(1983.10.27~1985.7.20)



제17대 총장 박봉식  
(1985.7.22~1987.8.13)



제18대 총장 조완규  
(1987.8.14~1991.8.13)



제19대 총장 김종운  
(1991.8.14~1995.2.28)



제20대 총장 이수성  
(1995.3.1~1995.12.1)



제21대 총장 선우중호  
(1996.2.12~1998.8.31)



제22대 총장 이기준  
(1998.11.11~2002.5.9)



제23대 총장 정운찬  
(2002.7.20~2006.7.19)



제24대 총장 이장무  
(2006.7.20~현재)

## 부총장

성명	재직기간	성명	재직기간
이교선	1949. 1. 17~1949. 8. 18	김종운	1987. 9. 1~1989. 1. 31
윤일선	1954. 4. 25~1956. 7. 19	김영국	1989. 2. 1~1991. 8. 18
한심석	1970. 4. 4~1970. 11. 11	김상주	1991. 8. 19~1995. 3. 7
민병구	1970. 12. 23~1973. 4. 7	선우중호	1995. 3. 7~1996. 2. 12
서명원	1973. 4. 12~1977. 2. 27	최송화	1996. 2. 17~1998. 11. 26
고병익	1977. 2. 27~1979. 5. 27	송병락	1998. 11. 27~2000.11.26
조완규	1979. 6. 18~1980. 8. 4	이현구	2000. 11. 27~2002. 7. 22
이현재	1980. 8. 5~1983. 10. 27	정명희	2002. 7. 23~2004. 7. 22
고윤석	1983. 11. 7~1985. 7. 22	이호인	2004. 7. 23~2006. 7. 22
조용섭	1985. 7. 26~1987. 7. 25	김신복	2006. 7. 23~현재
하두봉	1987. 7. 27~1987. 9. 1		

## 대학원장

(\*표는 직무대리, #표는 서리)

성명	재직기간	성명	재직기간
윤일선	1946. 10~1954. 4	김중한	1983. 9~1985. 8
이병도	1954. 5~1960. 4	김원룡	1985. 9~1987. 8
심상황*	1960. 5~1960. 9	김영국	1987. 9~1989. 1
이병도	1960. 9~1961. 6	장세희	1989. 2~1991. 1
김동익	1961. 6~1961. 9	김채운	1991. 2~1995. 3
권영대*	1961. 9~1962. 1	김완진	1995. 3~1996. 8
박종홍	1962. 1~1968. 8	홍승오	1996. 9~1998. 2
이인기	1968. 9~1969. 2	이상옥	1998. 3~2000. 12
김계숙	1969. 3~1970. 2	민상기	2000. 12~2001. 11
민병태	1970. 3~1971. 2	정정길	2001. 11~2002. 8
신동훈*	1970. 5~1971. 2	백충현	2002. 8~2004. 8
이승녕	1971. 2~1973. 8	이태수	2004. 8~2006. 8
한우근	1973. 9~1979. 9	권두환	2006. 8~현재
이만갑	1979. 9~1983. 9		

## 교무처장

성명	재직기간	성명	재직기간
Horace N. Underwood	1946. 8~1947. 8	김철수	1970. 12~1975. 4
최규남	1947. 8~1948. 6	김정수	1975. 4~1978. 5
이중수	1948. 6~1949. 3	최지훈	1978. 5~1980. 5
서두수	1949. 3~1949. 7	김종운	1980. 5~1982. 5
김중흡	1949. 7~1950. 9	강신택	1982. 5~1985. 7
이제구	1950. 9~1951. 10	이경식	1985. 6~1987. 7
김선기	1951. 10~1952. 9	이현구	1987. 7~1991. 7
김계숙	1952. 9~1954. 9	백충현	1991. 8~1994. 6
이중수	1954. 9~1956. 7	최 명	1994. 6~1995. 3
조병욱(교학국장)	1956. 8~1958. 8	윤계섭	1995. 3~1997. 3
유기천(교학국장)	1958. 8~1960. 7	김신복	1997. 3~1998. 12
유홍렬	1960. 7~1962. 7	권두환	1998. 12~2000. 12
서명원	1962. 7~1966. 5	유우익	2000. 12~2002. 7
김계숙*	1964. 10~1965. 3	김우철	2002. 7~2004. 7
심상황	1966. 5~1968. 5	변창구	2004. 7~2006. 7
이해영	1968. 5~1970. 12	김완진	2006. 7~현재

## 학생처장

성명	재직기간	성명	재직기간
김성택	1946. 8~1947. 11	이광호	1977. 4~1978. 1
손정규(여학생처장)	1946. 10~1950. 10	김영국	1978. 1~1980. 1
이선근	1947. 11~1950. 2	이수성	1980. 1~1980. 6
이제구(교무처장겸)	1950. 9~1951. 11	조용섭	1980. 7~1983. 1
김선기(교무처장겸)	1951. 11~1952. 5	남세진	1983. 1~1985. 1
권중휘	1952. 5~1956. 6	김용구	1985. 1~1985. 7
이한기	1959. 4~1960. 4	이상익	1985. 7~1987. 8
윤태림	1960. 5~1960. 7	남병수	1987. 9~1991. 8
심상황	1960. 8~1965. 1	김동진	1991. 9~1995. 3
김기선	1965. 1~1965. 8	이정빈	1995. 3~1997. 3
심상황	1965. 8~1966. 8	박성현	1997. 3~1998. 12
심중섭	1966. 8~1968. 8	김안중	1998. 12~2000. 12
이해영*	1968. 6~1968. 8	김기석	2000. 12~2002. 7
서돈각	1968. 8~1969. 3	황준연	2002. 8~2004. 7
이현재	1969. 3~1971. 8	이미나	2004. 8~2006. 7
이영기	1971. 8~1975. 4	이정재	2006. 8~현재
정병휴	1975. 4~1977. 4		



## 연구처장

성명	재직기간	성명	재직기간
권숙일	1989. 11~1991. 7	이병기	2000. 12~2002. 7
박상대	1991. 8~1995. 3	박종근	2002. 8~2004. 7
김진의	1995. 3~1997. 3	노정혜	2004. 8~2006. 7
이은철	1997. 3~1998. 12	국 양	2006. 8~현재
박상철	1998. 12~2000. 12		

## 기획실장

성명	재직기간	성명	재직기간
조대경	1984. 3~1985. 7	장달중	1996. 7~1998. 1
박재운	1985. 7~1987. 8	강광하	1998. 1~2000. 1
김경동	1987. 9~1989. 8	민상기	2000. 1~2000. 12
정영일	1989. 9~1991. 8	박오수	2001. 1~2002. 7
배무기	1991. 9~1993. 8	유근배	2002. 8~2004. 7
김동건	1993. 9~1995. 3	오성환	2004. 8~2006. 7
안경환	1995. 3~1996. 6	김형준	2006. 8~현재

## 사무국장

성명	재직기간	성명	재직기간
이계원	1946. 11~1948. 5	진용철	1983. 12~1984. 5
박준섭	1948. 5~1948. 11	박준열	1984. 5~1986. 12
김장현#	1948. 11~1949. 3	정희천	1986. 12~1988. 3
정인목	1949. 3~1951. 9	강기홍	1988. 3~1990. 1
김성찬	1951. 9~1958. 8	정충희	1990. 1~1991. 8
이동걸	1958. 8~1960. 11	허만운	1991. 8~1993. 1
김인수	1960. 11~1962. 8	송봉섭	1993. 1~1993. 4
손영동	1962. 8~1963. 8	김영준	1993. 4~1995. 3
정윤진	1963. 8~1964. 12	김연수	1995. 3~1995. 12
이창세	1964. 12~1968. 1	태철도	1996. 1~1997. 5
이규익	1968. 11~1971. 12	이성일	1997. 5~1997. 12
장인숙	1971. 12~1972. 12	서범석	1997. 12~1999. 6
황천성	1972. 12~1973. 12	정기언	1999. 6~2001. 1
김도연	1973. 12~1977. 4	이종서	2001. 1~2002. 9
박상인	1977. 4~1978. 3	서남수	2002. 9~2004. 1
김재규	1978. 3~1980. 6	이승무	2004. 1~2004. 9
석희갑	1980. 6~1983. 2	김남일	2005. 9~현재
이남영	1983. 2~1983. 12		

## 시설관리국장

성명	재직기간	성명	재직기간
김도연(관리국장)	1970. 5~1973. 12	정희천	1986. 8~1986. 12
박성규(관리국장)	1973. 12~1975. 3	정충희	1986. 12~1987. 10
장기옥	1975. 3~1977. 3	윤길상	1987. 10~1989. 1
김재규	1977. 4~1978. 3	유영철	1989. 2~1993. 7
이해경	1978. 3~1980. 8	이태우	1993. 7~1995. 10
장병규	1980. 8~1981. 8	석진복	1995. 12~1998. 6
어창수	1981. 8~1982. 11	이형구	1998. 7~1998. 12
이해경	1982. 12~1983. 9	정재성*	1999. 1~1999. 9
박대현	1983. 12~1985. 4	황지현	1999. 9~2005. 9
공영복	1985. 4~1986. 8	정재성	2005. 10~현재

## 기획처장

성명	재직기간	성명	재직기간
김진	1966. 2~1966. 10	최규원	1966. 10~1966. 11

## 건설본부장

성명	재직기간	성명	재직기간
이훈섭	1970. 4~1976. 2		

## 건설국장

성명	재직기간	성명	재직기간
김명집	1970. 6~1977. 4		

## 문리과대학장

성명	재직기간	성명	재직기간
이태규	1946. 10~1948. 9	이이하#	1958. 1~1960. 5
최윤식	1948. 9~1949. 10	이희승	1960. 5~1961. 9
조운제	1949. 10~1950. 5	이인기	1961. 9~1964. 6
손진태	1950. 5~1950. 10	권영대	1964. 7~1965. 9
방종현	1950. 10~1952. 5	김준섭	1965. 9~1966. 11
김상기	1952. 5~1957. 1	민병태	1966. 11~1970. 2
이진숙#	1957. 1~1957. 7	고병익	1970. 3~1974. 3
이희승	1957. 7~1958. 1	이혜영	1974. 3~1975. 2

## 상과대학장

성명	재직기간	성명	재직기간
박용하	1946. 10~1948. 4	최문환	1961. 4~1966. 11
이상훈	1948. 4~1957. 2	박희범	1966. 11~1968. 5
권오익	1957. 2~1960. 10	민병구	1968. 5~1970. 11
유홍렬#	1960. 10~1961. 4	변형윤	1970. 11~1975. 2

## 인문대학장

성명	재직기간	성명	재직기간
송 옥	1975. 3~1977. 12	이상옥	1993. 9~1995. 8
민석홍	1978. 1~1980. 7	성백인	1995. 9~1997. 8
강두식	1980. 8~1984. 8	유평근	1997. 9~1998. 12
김철준	1984. 8~1987. 7	한영우	1998. 12~2000. 12
김종운	1987. 7~1987. 8	권영민	2000. 12~2002. 12
김완진	1987. 9~1989. 8	이태수	2002. 12~2004. 8
홍승오	1989. 9~1991. 8	권두환	2004. 9~2006. 8
소광희	1991. 9~1993. 8	이태진	2006. 8~현재

## 사회과학대학장

성명	재직기간	성명	재직기간
조 순	1975. 3~1979. 1	김용구	1993. 7~1995. 2
이현재	1979. 1~1980. 8	김세원	1995. 2~1996. 2
김영국	1980. 8~1981. 5	한상복	1996. 2~1998. 2
손제석	1981. 5~1982. 1	신용하	1998. 2~2002. 2
강명규	1982. 2~1985. 7	정운찬	2002. 2~2002. 7
김채운	1985. 7~1987. 7	김인준	2002. 7~2004. 7
임종철	1987. 7~1989. 7	박삼옥	2004. 7~2006. 7
김일철	1989. 7~1991. 7	임현진	2006. 7~현재
박우희	1991. 7~1993. 7		

## 자연과학대학장

성명	재직기간	성명	재직기간
조완규	1975. 3~1979. 6	이인규	1993. 7~1995. 7
고윤석	1979. 6~1983. 6	장호완	1995. 7~1999. 7
장세희	1983. 6~1985. 7	이현구	1999. 7~2000. 12
하두봉	1985. 7~1987. 7	김하석	2000. 12~2002. 12
이상만	1987. 7~1989. 7	박성현	2002. 12~2004. 12
윤재한	1989. 7~1991. 7	오세정	2004. 12~현재
권숙일	1991. 7~1993. 7		

## 간호대학장

성명	재직기간	성명	재직기간
김매자	1992. 3~1994. 2	이은옥	2000. 3~2002. 2
홍려신	1994. 3~1996. 2	홍경자	2002. 3~2004. 3
이소우	1996. 3~1998. 2	서문자	2004. 3~2005. 1
박정호	1998. 3~2000. 2	박성애	2005. 1~현재

## 경영대학장

성명	재직기간	성명	재직기간
오상락	1975. 3~1978. 12	최종태	1995. 1~1997. 1
이용준	1979. 1~1983. 1	곽수일	1979. 1~1999. 1
심병구	1983. 1~1987. 1	윤계섭	1999. 1~2001. 1
김정년	1987. 1~1989. 1	조동성	2001. 1~2003. 1
한희영	1989. 1~1993. 1	심병구	2003. 1~2005. 1
김식현	1993. 1~1995. 1	안상형	2005. 1~현재

## 공과대학장

성명	재직기간	성명	재직기간
김동일	1946. 10~1948. 11	이낙주	1984. 1~1985. 12
이승기	1948. 11~1950. 7	김상주	1986. 1~1989. 12
이정기#	1950. 8~1952. 3	이기준	1990. 1~1993. 12
김동일	1952. 3~1954. 4	선우중호	1994. 1~1995. 3
황영모	1954. 4~1958. 5	이호인*	1995. 3~1995. 3
김문상#	1958. 5~1960. 5	한송엽	1995. 3~1997. 1
이균상	1960. 5~1963. 8	이장무	1997. 2~2002. 6
정성계*	1963. 8~1963. 8	양영순*	2002. 6~2002. 7
이 량	1963. 8~1969. 12	한민구	2002. 7~2005. 7
김희철	1970. 1~1975. 12	윤재륜*	2005. 8~2005. 9
이재성	1976. 1~1979. 12	김도연	2005. 9~현재
이택식	1980. 1~1983. 12		

## 농업생명과학대학장

(1992년 이전은 농과대학장)

성명	재직기간	성명	재직기간
조백현	1946. 10~1961. 4	오봉국	1987. 7~1989. 7
윤상원	1961. 4~1961. 9	한인규	1989. 7~1991. 7
김문협*	1961. 9~1962. 1	고재균	1991. 7~1993. 7
김호식	1962. 1~1968. 12	정창계	1993. 7~1995. 7
김문협*	1968. 1~1968. 12	고학균	1995. 7~1997. 7
표현구	1968. 12~1974. 9	김호탁	1997. 7~1999. 7
심종섭	1974. 9~1975. 12	이돈구	1999. 7~2001. 7
이춘영	1976. 1~1980. 1	류관희	2001. 7~2003. 7
이은웅	1980. 1~1983. 1	이무하	2003. 7~2005. 7
조용섭	1983. 1~1985. 7	이전제	2005. 7~현재
유순호	1985. 7~1987. 7		

## 미술대학장

성명	재직기간	성명	재직기간
장 발	1946. 10~1961. 5	권순형	1990. 1~1991. 12
박갑성	1961. 5~1968. 2	최만린	1992. 1~1995. 12
김종영	1968. 2~1972. 2	윤명로	1996. 1~1997. 12
김세중	1972. 2~1977. 12	부수언	1998. 1~1999. 12
박세원	1978. 1~1981. 12	하동철	2000. 1~2001. 12
서세옥	1982. 1~1985. 12	김병종	2002. 1~2003. 12
조영제	1986. 1~1989. 12	권영길	2003. 12~현재

## 법과대학장

성명	재직기간	성명	재직기간
고병국	1946. 10~1947. 12	김치선	1980. 5~1984. 6
최태영	1947. 12~1949. 2	배재식	1984. 6~1988. 6
이선근#	1949. 2~1950. 2	이수성	1988. 6~1990. 6
진승록	1950. 2~1950. 10	박병호	1990. 6~1992. 6
유기천#	1950. 10~1952. 8	서원우	1992. 6~1994. 6
고병국	1952. 8~1957. 6	백충현	1994. 6~1996. 6
신태환	1957. 7~1961. 7	송상현	1996. 6~1998. 6
유기천	1961. 7~1965. 8	김유성	1998. 6~2000. 6
김기두	1965. 8~1967. 3	김동희	2000. 6~2002. 6
이한기	1967. 3~1970. 3	안경환	2002. 6~2004. 6
서돈각	1970. 3~1972. 5	성낙인	2004. 6~2006. 5
김증한	1972. 5~1976. 5	호문혁	2006. 6~현재
이한기	1976. 5~1980. 5		

## 사범대학장

성명	재직기간	성명	재직기간
장이옥	1946. 10~1948. 5	박한식	1975. 4~1978. 12
이종수#	1948. 5~1948. 6	정원식	1979. 1~1983. 1
채관석	1948. 6~1949. 6	김종서	1983. 1~1985. 7
손진태	1949. 6~1949. 9	이돈희	1985. 7~1987. 7
고광만	1949. 9~1951. 9	이맹성	1987. 7~1989. 7
김기석	1951. 10~1953. 12	이원순	1989. 7~1991. 7
고광만	1953. 12~1956. 6	황적륜	1991. 7~1993. 7
이종수	1956. 6~1960. 7	박용현	1993. 7~1994. 2
윤태림	1960. 7~1961. 9	김대행*	1994. 2~1994. 2
김성근#	1961. 9~1961. 9	황정규	1994. 2~1996. 2
이종수	1961. 9~1967. 3	황재기	1996. 2~2000. 2
김성근	1967. 3~1971. 3	조창섭	2000. 2~2004. 2
서명일	1971. 3~1973. 4	윤정일	2004. 2~2006. 2
정범모	1973. 4~1975. 4	조영달	2006. 2~현재

## 생활과학대학장

(1997년 이전은 가정대)

성명	재직기간	성명	재직기간
장명옥	1969. 1~1973. 1	이은영	1997. 1~1998. 3
현기순	1973. 1~1977. 1	이기영	1998. 3~2000. 3
이혜수	1977. 1~1981. 1	최정화	2000. 3~2002. 2
임원자	1981. 1~1985. 1	김민자	2002. 3~2004. 2
이순원	1985. 1~1989. 1	황인경	2004. 3~2006. 2
이기춘	1989. 1~1993. 1	한경혜	2006. 3~현재
안승요	1993. 1~1997. 1		

## 수의과대학장

성명	재직기간	성명	재직기간
오순섭	1953. 4~1958. 5	조충호	1991. 3~1995. 2
이영소#	1958. 5~1960. 5	최희인	1995. 3~1997. 2
오순섭	1960. 5~1962. 2	김선중	1997. 3~1999. 2
이영소	1976. 3~1981. 2	이영순	1999. 3~2001. 2
이장락	1981. 3~1985. 2	이홍식	2001. 3~2003. 2
정창국	1985. 3~1987. 2	이문한	2003. 3~2005. 2
임창형	1987. 3~1989. 2	양일석	2005. 3~현재
권중국	1989. 3~1991. 2		

## 약학대학장

성명	재직기간	성명	재직기간
한구동	1950. 9~1953. 1	국채호	1982. 1~1985. 7
윤일선#	1953. 1~1953. 4	유병설	1985. 7~1987. 7
한구동	1953. 4~1957. 2	정원근	1987. 7~1989. 7
채동규#	1957. 2~1958. 5	라운용	1989. 7~1991. 7
한구동	1958. 5~1962. 5	김낙두	1991. 7~1993. 7
홍문화	1962. 5~1965. 12	문창규	1993. 7~1995. 7
채동규	1966. 1~1969. 1	박만기	1995. 7~1997. 7
이혜영*	1969. 1~1969. 3	이민화	1997. 7~1999. 7
김영근	1969. 3~1972. 9	천문우	1999. 7~2003. 7
한관섭	1972. 9~1974. 3	주상섭	2003. 7~2005. 7
우린근	1974. 3~1977. 12	이승기	2005. 7~현재
이상섭	1978. 1~1981. 12		

## 음악대학장

성명	재직기간	성명	재직기간
현제명	1953.1~1960.10	백낙호	1987. 9~1989. 8
김성태	1960. 10~1969. 12	이남수	1989. 9~1991. 8
이혜구	1970. 1~1973. 12	김용진	1991. 9~1993. 8
이상춘	1974. 1~1975. 12	서우석	1993. 9~1995. 8
전봉초	1976. 1~1980. 1	이성균	1995. 9~1997. 9
박민중	1980. 1~1983. 8	이성천	1997. 9~1999. 8
이성재	1983. 9~1985. 8	김민	1999. 9~2005. 8
정희갑	1985. 9~1987. 8	신수정	2005. 9~현재

## 의과대학장

성명	재직기간	성명	재직기간
심호섭	1946. 10~1947. 9	서병설	1980. 4~1984. 4
이갑수	1947. 10~1950. 10	김영균	1984. 4~1986. 4
이제구	1950. 10~1955. 11	이광호	1986. 4~1990. 4
김성진	1955. 11~1956. 6	김상인	1990. 4~1992. 4
명계완	1956. 9~1960. 9	김승욱	1992. 4~1994. 4
나세진	1960. 9~1964. 9	이순형	1994. 4~1998. 4
이제구	1964. 9~1968. 9	이정상	1998. 4~2000. 4
한심석	1968. 9~1970. 4	이종욱	2000. 4~2004. 4
권이혁	1970. 4~1976. 4	왕규창	2004. 4~현재
신동훈	1976. 4~1980. 4		

## 보건대학원장

성명	재직기간	성명	재직기간
명계완	1959. 4~1960. 6	김정순	1992. 4~1994. 4
김인달	1960. 9~1971. 12	이용옥	1994. 4~1996. 4
심상황	1972. 1~1972. 3	정경균	1996. 4~1998. 4
박형중	1972. 9~1976. 4	정문호	1998. 4~2000. 4
권이혁	1976. 4~1978. 4	문옥륜	2000. 4~2002. 4
허 정	1978. 4~1982. 4	백남원	2002. 4~2004. 5
홍창의	1982. 4~1984. 4	양봉민	2004. 5~2006. 5
김정근	1984. 4~1988. 4	이승옥	2006. 5~현재
정문식	1988. 4~1992. 4		

## 행정대학원장

성명	재직기간	성명	재직기간
신태환	1959. 4~1960. 7	유 훈	1976. 11~1982. 12
이병도#	1960. 9~1961. 3	김해동	1982. 12~1984. 12
이용희	1961. 4~1962. 3	조석준	1984. 12~1988. 12
김증한	1962. 2~1965. 12	강신택	1988. 12~1990. 12
유 훈*	1966. 1~1966. 11	오석홍	1990. 12~1992. 12
이한빈	1966. 11~1968. 11	김광웅	1992. 12~1994. 12
박동서*	1968. 3~1968. 9	정정길	1994. 12~1996. 12
이한빈	1968. 11~1970. 9	노화준	1996. 12~1998. 12
조석준*	1970. 9~1970. 11	김신복	1998. 12~2000. 12
김운태	1970. 11~1972. 11	오연천	2000. 12~2004. 12
박동서	1972. 11~1976. 11	이달곤	2004. 12~현재



## 환경대학원장

성명	재직기간	성명	재직기간
노용희	1973. 4~1978. 10	유병림	1998. 11~2000. 3
권태준	1978. 10~1984. 11	이정진	2000. 4~2002. 3
최상철	1984. 11~1986. 11	황기원*	2002. 4~2002. 4
김안제	1986. 11~1990. 11	김정욱	2002. 4~2003. 12
김형국	1990. 11~1994. 11	이동수*	2003. 12~2004. 1
임강원	1994. 11~1996. 11	황기원	2004. 1~현재
양병이	1994. 11~1998. 11		

## 국제대학원장

(2003년 이전은 국제지역원장)

성명	재직기간	성명	재직기간
홍원탁	1997. 2~1999. 1	박태호	2002. 3~2003. 2
조동성	1999. 4~2001. 3	김용덕	2003. 3~현재
민상기	2001. 4~2002. 3		

## 치의학대학원장

(2005년 이전은 치과대학장)

성명	재직기간	성명	재직기간
박명진	1946. 9~1957. 12	김규식	1985. 5~1987. 5
김영창	1958. 7~1962. 7	김명국	1987. 5~1991. 5
김동순	1962. 7~1965. 3	이승우	1991. 5~1993. 5
이영옥	1965. 3~1969. 3	이종훈	1993. 5~1995. 5
이춘근	1969. 3~1971. 3	김광남	1995. 5~1998. 11
김주환	1971. 5~1973. 5	고재승	1998. 12~2000. 12
선우양국	1973. 5~1977. 5	정중평	2000. 12~2002. 12
안형규	1977. 5~1981. 5	김중수	2002. 12~2004. 12
김영해	1981. 5~1985. 5	정필훈	2004. 12~현재

## 경영대학원장

성명	재직기간	성명	재직기간
최문환	1966. 1~1966. 11	황병준	1968. 5~1972. 5
민병구	1966. 11~1968. 5	오상락	1972. 5~1975. 2

**교육대학원장**

성명	재직기간	성명	재직기간
이종수	1963. 4~1971. 8	이 찬	1974. 3~1975. 2
김성근	1971. 9~1974. 3		

**사법대학원장**

성명	재직기간	성명	재직기간
유기천	1962. 3~1965. 8	서돈각	1969. 3~1970. 3
서돈각*	1964. 12~1965. 2	이한기	1970. 3~1971. 6
김기두	1965. 8~1969. 3		

**신문대학원장**

성명	재직기간	성명	재직기간
김규환	1968. 1~1974. 1	이만갑	1974. 1~1975. 2
이상희*	1968. 5~1968. 8		

**교양과정부장**

성명	재직기간	성명	재직기간
민석홍	1968. 1~1975. 2	정명환*	1969. 4~1969. 6

**입학관리본부장**

성명	재직기간	성명	재직기간
유영제	2000. 8~2002. 12	이종섭	2004. 12~2006. 7
김완진	2002. 12~2004. 12	김영정	2006. 8~현재

**대외협력본부장**

(2001년 이전은 국제교류센터장)

성명	재직기간	성명	재직기간
양윤재	1996. 7~1999. 4	노경수	2003. 1~2006. 7
박태호	1999. 4~2002. 12	송호근	2006. 8~현재

**정보회본부장**

(1991년~1999년은 중앙전산원장, 1991년 이전은 전자계산소장)

성명	재직기간	성명	재직기간
김철수	1975. 3~1977. 3	조유근	1993. 8~1995. 8
김영택	1977. 3~1980. 9	신환철	1995. 8~1997. 8
황희용	1980. 9~1983. 8	신현식	1997. 8~1999. 8
김종상	1983. 8~1985. 8	이석호	1999. 8~2001. 11
이기준	1985. 8~1989. 8	고 건	2001. 11~2002. 12
이석호	1989. 8~1991. 8	김형주	2003. 1~2004. 12
고 건	1991. 8~1993. 8	박은우	2005. 1~현재

**중앙도서관장**

(1992년 이전은 도서관장)

성명	재직기간	성명	재직기간
김진섭	1946. 10~1947. 5	이기문	1985. 7~1987. 7
이병도	1947. 10~1952. 9	박병호	1987. 7~1989. 7
정광현	1952. 9~1962. 5	선우중호	1989. 7~1993. 7
김계숙	1962. 5~1968. 5	박효근	1993. 7~1995. 7
최재희	1968. 5~1970. 5	진교훈	1995. 7~1999. 7
전제욱	1970. 5~1972. 5	이석호	1999. 7~2001. 11
이만갑	1972. 5~1978. 5	허성도	2001. 11~2003. 11
김운태	1978. 5~1980. 5	허남진	2003. 11~2006. 7
최지훈	1980. 5~1981. 7	박명진	2006. 8~현재
이영기	1981. 7~1985. 7		

**기초교육원장**

성명	재직기간	성명	재직기간
이왕재	2002. 7~2002. 8	임현진	2004. 8~2006. 7
변창구	2002. 8~2004. 8	박은정	2006. 8~현재

**박물관장**

성명	재직기간	성명	재직기간
김상기	1947. 10~1953. 9	김원용	1982. 10~1985. 9
이병도	1953. 10~1954. 11	임효재	1985. 9~1991. 8
이상백	1954. 11~1962. 11	안휘준	1991. 9~1995. 8
김원용	1962. 11~1968. 9	최몽룡	1995. 9~1999. 8
이만갑	1968. 9~1972. 5	이종상	1999. 9~2003. 8
김원용	1972. 5~1980. 5	김영나	2003. 9~2005. 8
정병욱	1980. 5~1982. 10	박낙규	2005. 9~현재

## 규장각한국학연구원장

(2006년 이전은 규장각관장)

성명	재직기간	성명	재직기간
한영우	1992. 6~1996. 6	송기중	2003. 5~2005. 4
이상택	1996. 6~1999. 4	이상규	2005. 5~2006. 1
정옥자	1999. 5~2003. 4	김영식	2006. 2~현재

## 학생기숙사사감장(관악사)

성명	재직기간	성명	재직기간
남세진	1975. 8~1978. 12	임번장	1991. 9~1997
김진세	1978. 12~1980. 12	정철수	1997~2001
신익성	1980. 12~1984. 12	김종욱	2001~2002
이상익	1985. 1~1985. 8	김찬중	2002~2004
하영칠	1985. 8~1987. 7	이건수	2004~현재
황재기	1987. 8~1991. 8		

## 보건진료소장

성명	재직기간	성명	재직기간
심상환	1957. 3~1965. 1	김건열*	1981. 7~1981. 9
김인달	1965. 1~1967. 1	김진영	1982. 8~1988. 8
권이혁	1967. 1~1970. 6	김건열	1988. 8~1993. 2
차철환	1970. 6~1973. 1	최강원	1993. 2~1997. 2
노병호	1973. 1~1980. 4	윤용범	1997. 2~2003. 2
김건열*	1980. 4~1980. 8	이명묵	2003. 2~2004. 3
한용철	1980. 9~1982. 8	한성구	2004. 3~현재

## 교수학습개발센터소장

(2001년 이전은 교육매체제작소장)

성명	재직기간	성명	재직기간
안수길	1975. 9~1977. 9	장호익	1995. 8~1997. 7
박종은	1977. 9~1982. 3	나일주	1997. 8~1999. 7
나형용	1982. 3~1986. 2	이석호	1999. 8~2000. 11
정수진	1986. 3~1989. 2	김영수	2000. 12~2001. 11
박만기	1989. 3~1991. 7	강명구	2001. 12~2003. 8
김신일	1991. 8~1993. 7	전형준	2003. 9~현재
장상호	1993. 8~1995. 7		

**실험동물자원관리원장**

(2005년 이전은 실험동물사육장장)

성명	재직기간	성명	재직기간
박상대*	1975. 10~1977. 8	이정주	1989. 8~1993. 7
김낙두	1977. 8~1978. 8	강만식	1993. 8~1994. 5
박상대	1977. 9~1981. 1	김경진	1994. 5~1999. 1
강현삼	1981. 1~1985. 1	성노현	1999. 1~2003. 1
하두봉	1985. 1~1985. 7	박재학	2003. 1~현재
노현모	1985. 8~1989. 7		

**기초과학공동기원장**

(2004년 이전은 기초과학교육연구공동기원장)

성명	재직기간	성명	재직기간
권숙일	1988. 12~1989. 11	이동규	1999. 8~2001. 8
양철학	1989. 11~1993. 11	유인석	2001. 8~2003. 8
장호완	1991. 11~1995. 8	홍승환	2003. 8~2005. 8
김경태	1995. 8~1997. 8	강 현	2005. 8~현재
이광웅	1997. 8~1999. 8		

**언어교육원장**

(2001년 이전은 어학연구소장)

성명	재직기간	성명	재직기간
서명원	1962. 12~1966. 6	조준학	1984. 8~1986. 8
김 진	1966. 6~1966. 10	이현복	1986. 8~1988. 8
황찬호	1966. 10~1971. 1	박남식	1988. 8~1995. 3
김종운	1971. 1~1974. 6	김명렬	1995. 4~1999. 3
황찬호	1974. 6~1976. 6	문양수	1999. 4~2001. 3
장석진	1976. 6~1980. 6	김성곤	2001. 4~2005. 3
김한곤	1980. 8~1984. 8	홍기선	2005. 4~현재

**대학생활문화원장**

(1976~2001년은 학생생활연구소장, 1976년 이전은 학생지도연구소장)

성명	재직기간	성명	재직기간
김기석	1967. 12~1968. 8	차재호	1986. 6.~1988. 6
심종섭	1968. 9~1970. 11	원호택	1988. 6~1992. 6
이의철	1970. 12~1976. 11	서봉연	1992. 6~1995. 3
정양은	1976. 12~1980. 9	김정오	1995. 4~1997. 3
조대경	1990. 9~1981. 7	김상균	1997. 4~1999. 3
박용현	1981. 7~1982. 3	김계현	1999. 4~2003. 3
이관용	1982. 3~1985. 7	민경환	2003. 4~2005. 3
이장호	1985. 8~1986. 6	김명언	2005. 4~현재

**성희롱 성폭력 상담소장**

성명	재직기간	성명	재직기간
김계현	2000. 12. 22~2002. 8	김은경	2002. 8~현재

**기록관장**

성명	재직기간	성명	재직기간
김기석	2001. 9~2001. 12	김기석	2005. 12~현재
송기호	2001. 12~2005. 12		

**미술관장**

성명	재직기간	성명	재직기간
이종상	2003. 1~2003. 8	변창구*	2005. 9~2006. 1
김병중	2003. 9~2005. 8	정형민	2006. 1~현재

**환경안전원장**

성명	재직기간	성명	재직기간
김준용	1982. 6~1987. 8	이호인	1999. 3~2000. 6
심정섭	1987. 9~1991. 1	정태학	2000. 7~2004. 6
홍성일	1991. 2~1995. 2	이정학	2004. 6~현재
이화영	1995. 3~1999. 2		

## 2. 현직교수 명단(2006. 9. 1 현재)

### 인문대학

(직급 및 가나다순)

학과명	교수명단
국어국문학과	(교) 권두환 권영민 김창섭 박희병 서대석 송기중 송철의 오세영 이상익 이현희 임홍빈 장소원 조남현 최명옥 (부) 김성규 신범순 양승국 이종묵 전영철 정병설 정승철 (조) 박성창 방민호 조해숙 조현실
중어중문학과	(교) 류종묵 서경호 송용준 오수형 이영주 이창숙 전형준 허성도 (부) 이강재 (조) 김월희
영어영문학과	(교) 김성곤 변창구 신평현 신정현 유명숙 이성원 이정호 이종숙 장경렬 정상준 홍기선 홍기창 (부) 권혁승 김명환 민은경 손창용 송미정 유두선 유은정 이재영 조철원 (조) 김현진 박용예 봉준수 손영주 (전) 안지현
불어불문학과	(교) 오생근 이근우 이동렬 장재성 홍재성 (부) 김정희 유희식 최권행 (조) 이성현 이영목
독어독문학과	(교) 고원 신수송 안삼환 임종대 임한순 전영애 (부) 강창우 오순희 임홍배 (조) 구명철 김임구 정향균 최윤영
노어노문학과	(교) 김희숙 이인영 (부) 박종소 박현섭 (조) 변현태 송은지
서어서문학과	(교) 김은경 김창민 김춘진 (부) 김현균 이만기 (조) Franco Luis Quinziano
언어학과	(교) 권재일 김주원 이승재 (부) 남승호 이호영 전중호 정민화 (조) 신희필
국사학과	(교) 권태익 김인걸 노명호 노태돈 송기호 이태진 정옥자 최병현 (부) 정용욱 (조) 문중양 이상찬
동양사학과	(교) 김영식 김용덕 김호동 박한제 오금성 유인선 이성규 (부) 김형종 (조) 이은정
서양사학과	(교) 박지향 배영수 안병직 주경철 최갑수 한정숙 (조) 박홍식
철학과	(교) 김남두 김상환 김영정 김효명 백종현 송영배 이남인 이명현 이태수 조인래 허남진 황경식 (부) 김기현 박찬국 정호근 조은수 (조) 강진호 정원재
종교학과	(교) 금장태 김종서 윤원철 (조) 배철현 최종성 (전) 유요한
미학과	(교) 김문환 박낙규 오종환 (부) 이창환 (조) 김진엽 이해완
고고미술사학과	(교) 김영나 이선복 이주형 최몽룡 (조) 김종일 이준정 장진성

### 사회과학대학

(직급 및 가나다순)

학과명	교수명단
정치학과	(교) 김세균 김홍우 박찬욱 백창재 안청시 유희림 이정복 장달중 황수익 (부) 임경훈 임혜란 (조) 김영민
외교학과	(교) 박상섭 신옥희 윤영관 정재호 최정은 하영선 하용출 (부) 장인성 전재성 (조) 김상배 이옥연
경제학부	(교) 강광하 김선구 김세직 김수행 김신행 김완진 김인준 류근관 양동휴 오성환 이근

	이상승 이성휘 이승훈 이영훈 이인호 이준구 이지순 이창용 이천표 전영섭 정운찬 최병선 표학길 홍기현 황윤재 (부) 김대일 김병연 김영식 김재영 박지형 안동현 이철희 장용성
사회학과	(교) 박명규 송호근 이재열 임현진 장경섭 정근식 정진성 한상진 홍두승 (부) 서이중 (조) 박경숙 배은경 장덕진 정일균
인류학과	(교) 김광억 오명석 왕한석 전경수 황익주 (부) 강정원 권숙인 (조) 박순영 정향진
심리학과	(교) 권석만 김명언 김정오 민경환 이춘길 (부) 김청택 이훈진 최인철 최진영 (조) 고성룡 곽금주 이상훈
지리학과	(교) 박기호 박삼옥 유근배 유우익 허우궁 (부) 박수진 이정만 (조) 손정렬
사회복지학과	(교) 김상균 김태성 김혜란 조홍식 최성재 (부) 이봉주 (조) 강상경 구인희 안상훈
언론정보학과	(교) 강남준 강명구 박명진 박승관 양승목 차배근 (부) 윤석민 이재현 이준웅 (기조) 이증식

**자연과학대학**

(직급 및 가나다순)

학과명	교수명단
수리과학부	(교) 강석진 강정혁 강현배 계승혁 김도한 김명환 김성기 김영원 김창호 김혁 김홍중 신동우 이우영 이인석 정재명 조영현 지동표 최형인 한중규 (부) 김영훈 김인강 박종일 변동호 이기암 정자아 천정희 (조) 강명주 김판기 변순식 이상혁 하승열 홍진
통계학과	(교) 김우철 박병욱 박성현 박태성 송문섭 이영조 전종우 조신섭 (부) 김용대 이상열 이재용 (조) 오희석
화학부	(교) 강현 김경태 김관 김명수 김병문 김성근 김하석 김희준 박종상 백명현 서세원 서정쌍 서정현 신국조 신석민 신정후 신환철 윤도영 이상엽 이은 장두전 정두수 정영근 최명언 홍종인 (부) 박충모 손병혁 이성훈 이진규 (조) 김진수 남좌민 박승범 석차욱 임종태 정연준
생명과학부	(교) 강봉균 강사욱 김경진 김상구 김상중 김선영 김원 노정혜 박동은 박종욱 성노현 안정선 안태인 이계준 이병재 이종섭 임정민 정가진 정구홍 정진하 정학성 홍성욱 홍승환 홍영남 홍주봉 황덕수 (부) 김재범 석영재 안광석 이건수 이일하 이준호 정용근 천종식 최성화 (조) 김빛내리 노유선 박상현 백성희 설재홍 이은주 이현숙 최석우 최연희 허원기
지구환경과학부	(교) 강인식 고철환 김경렬 김구 문우일 박창업 손병주 오임상 윤순창 이강근 이동규 이용일 이창복 장호완 전중갑 조문섭 조병철 조성권 최덕근 최우갑 (부) 강현중 김준모 백종진 이인성 임규호 장경일 정해진 허창희 (조) 김규범 이상목 이성근 정해명 허영숙
물리·천문학부	(교) 강병남 구분철 국양 김대식 김두철 김선기 김정구 김진의 노태원 민동필 박건식 박영우 방형찬 소광섭 오세정 우종천 유인석 이명균 이상각 이수중 이재형 이준규 이형목 임지순 제원호 조용민 최무영 홍승수 홍종배 (부) 김수봉 박용선 박운 안경원 유재준 이원중 전현수 차국린 채종철 홍승훈 (조) 김기훈 김용태 김형도 이정훈 임명신 최석봉 최선호 (기조) 이상민 전진상 홍성철



**간호대학**

(직급 및 가나다순)

학과명	교수명단
간호학과	(교) 김금순 박성애 박영숙 박현애 송미순 윤순녕 이명선 이은옥 이인숙 최명에 하양숙 한경자 홍경자 (부) 김진현 최스미 (조) 김정은 박연환 서은영 정재원

**경영대학**

(직급 및 가나다순)

학과명	교수명단
경영학과	(교) 곽수근 김병도 김성기 김영진 김재일 남상오 남익현 민상기 박오수 박원우 박정식 안상형 안중호 안태식 윤계섭 이동기 이유재 이창우 임종원 정은우 조동성 조재호 주우진 최도성 황이석 (부) 고봉찬 김성수 노상규 박남규 박상욱 박철 박철순 송재용 이경목 조성욱 최혁 (조) 김상훈 김수욱 김진교 박진수 박희준 윤석화 장정주 채준 최중학

**공과대학**

(직급 및 가나다순)

학과명	교수명단
기계항공공학부	(교) 강신형 고상근 김민수 김승조 김용협 김유단 김윤영 김종원 김지환 노승탁 박종우 박찬국 박희재 신효철 오수의 유정열 이권우 이정수 이교일 이동호 이수갑 이우일 이장무 이준식 정석호 정인석 주종남 최만수 최해천 한동철 (부) 강연준 기창돈 김종암 김찬중 민경덕 송성진 안성훈 윤영빈 이정훈 조맹효 (조) 김규홍 김현진 김호영 서갑양 신상준 여재익 (전) 차석원
재료공학부	(교) 강신후 강택 강태진 권동일 김기범 김도연 김장주 김재필 김현이 김형준 김환 박수영 박종래 손현준 신광선 오규환 유한일 윤의준 윤재륜 윤종규 이정중 이후철 장지영 정관수 조원호 주승기 홍국선 (부) 곽승엽 김상국 김영운 박병우 박찬 서용석 안철희 유상임 이경우 주영창 홍성현 황농문 황철성 (조) 김미영 유용렬 한홍남
전기·컴퓨터공학부	(교) 고건 고형석 권옥현 김명수 김성준 김용권 김종권 김태정 김형주 남상욱 노종선 문수묵 민상렬 민홍식 박근수 박병국 박세웅 박영준 박재홍 박종근 서광석 서진현 설승기 성평모 성원용 신영길 신현식 염현영 우치수 유석인 이광복 이범희 이병기 이병호 이상구 이상욱 이석호 이신두 이용환 이장규 이재홍 이종덕 장병탁 전국진 전주식 전희숙 정덕균 정현교 조동일 조보형 조유근 차상균 채수의 최기영 최양희 최종호 최진영 하순희 하인중 한민구 한상영 황기웅 (부) Robert Ian McKay 권영우 김남수 김성철 김지홍 김태환 문병로 문승일 박남규 백윤홍 서승우 신형철 신규석 이경무 이광근 이재진 이창희 이혁재 장래혁 조남익 홍성수 (조) 권태경 윤용태 이정우 이제희 이창건 최성현 (기조) 김수환 심형보 홍용택 (기전) 권성훈 엄현상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교) 강주명 고승영 고현무 김명모 김재관 박창호 서경덕 서일원 서정희 신창수 안건혁 이길성 이정인 장승필 전경수 전효택 정충기 정태학 한무영 (부) 김영오 김용일 김재영 박준범 박형동 이해성 전석원 정창무 조희찬 최종근 허은녕 (조) 남경필 송재준 유기윤

화학생물공학부	(교) 김병기 김영규 김화용 문상흡 박태현 오승모 유영제 윤인섭 이승중 이윤식 이정학 이종협 이지화 이호인 이홍희 장정식 조재영 차국현 최차용 최창균 (부) 김재정 백승렬 성영은 송인규 안경현 윤제용 이윤우 이종찬 한종훈 현택환 (조) 한지숙 (기전) 신규순
건축학과	(교) 김광우 김광현 김진균 심우갑 최재필 (부) 김현철 박홍근 이철호 이현수 전봉희 최 두남 홍성걸 (조) 김승희 박문서 박소현 여명석
산업공학과	(교) 강석호 김태유 박진우 오형식 윤명환 이면우 이창훈 정성진 (부) 박용태 이정동 조 성준 홍성필 황준석 (조) 박종현 이종수 장우진 홍유석 (전) 강진아
원자핵공학과	(교) 강창순 김창효 박근철 이은철 최희동 홍상희 황일순 (부) 김근호 김은희 서균렬 주 한규 황용석
조선해양공학과	(교) 서정천 신종계 양영순 이규열 이기표 장창두 최항순 (부) 김태완 성우제 조선희 홍 석운 (조) 김용환

### 농업생명과학대학

(적급 및 가나다순)

학과명	교수명단
식물생산과학부	(교) 고희종 김기선 김병동 이변우 이승구 이호진 이희재 (부) 백남천 손정의 이석하 최 도일 (조) 강병철 서학수 양태진 전창후
산림과학부	(교) 김성일 윤여창 이경준 이돈구 이전제 이학래 정주상 현정오 (부) 김현중 이우신 장 진성 (조) 여환명 윤혜정 임상준 최인규 (전) 박필선
바이오시스템· 소재학부	(교) 김경옥 노상하 류관희 박영환 박종신 조성인 탁태문 (부) 이종용 정종훈 (조) 김용 노 현진호 (전) 이기훈
조경·지역 시스템공학부	(교) 권순국 김귀곤 김성균 박승우 안동만 임승빈 장병욱 (부) 이동근 이정재 (조) 김성 배 이인복 정옥주 최진용
농경제사회학부	(교) 김성수 김완배 김한호 노재선 최영찬 (부) 권오상 김의준 이성우 이태호 정진화 (조) 김관수 안동환 임정빈
농생명공학부	(교) 가종억 김수언 김수일 문태화 박관화 박은우 서진호 안용준 이무하 이용환 이인 원 이준호 이형주 정진 조중수 최양도 최윤재 최홍림 하종규 한재용 (부) 김국형 김민 균 김영호 김정한 노희명 오기봉 유상렬 이시혁 임정목 최상호 황인규 (조) 김유용 김 희발 윤철희 이상기 이승환 이창규 제연호 (전) 최영진
농산업교육과	(교) 이용환 정철영 (부) 나승일 (조) 김진모 (전) 이찬

## 미술대학

(직급 및 가나다순)

학과명	교수명단
동양화과	(교) 김병중 정형민 (부) 김성희 (조) 김형숙 신하순 (전) 차동하
서양화과	(교) 서용선 윤동천 정영목 한운성 (부) 김춘수 심철용 (조) 김정희
조소과	(교) 신현중 전준 최인수 (부) 문주 이용덕 (조) 오귀원
디자인학부	(교) 권영걸 백명진 신광석 유리지 이순중 장수홍 장호익 (부) 김민수 서도식 (조) 김수정 박영목 백경찬 윤주현 황갑순

## 법과대학

(직급 및 가나다순)

학과명	교수명단
법학부	(교) 권오승 김건식 남효순 박은정 성낙인 송상현 신동운 안경환 양창수 윤진수 이상면 이흥재 정상조 정인섭 최병조 최종고 호문혁 (부) 김도균 김재형 김화진 박상근 박정훈 송석운 이용식 이창희 이철수 장승화 정궁식 정종섭 조국 조홍식 한인섭 (조) 구대환 권영준 김형석 송옥렬 양현아 오정후 이근관 이우영 이원우 최봉경 허성욱

## 사범대학

(직급 및 가나다순)

학과명	교수명단
교육학과	(교) 김계현 김기석 김안중 나일주 문용린 박성익 우용제 윤정일 이종재 조용환 진동섭 (부) 김동일 김창대 백순근 임철일 한승희 (조) 박현정 소경희 신정철 신종호 오현석
국어교육과	(교) 김대행 김중철 민현식 우한용 윤여탁 윤희원 (부) 구분관
영어교육과	(교) 권오량 김길중 신문수 양현권 (부) 김진완 안현기 이병민 (조) 오선영
불어교육과	(교) 심봉섭 이형식 장승일
독어교육과	(교) 권오현 이광숙 한기상 (조) 김정용 성상환
사회교육과	(교) 이미나 조영달 (부) 박성혁 (조) 모경환 정원규
역사교육과	(교) 양호환 이경식 (조) 김덕수 김태웅 유용태
지리교육과	(교) 김종욱 류재명 (조) 박배균 박병익 신정엽 이상일
국민윤리교육과	(교) 박찬구 박효종 이은죽 전인영 (조) 정창우
수학교육과	(교) 우정호 정상권 조승제 조한혁 (부) 권오남 김서령 최영기
물리교육과	(교) 송진웅 이성목 (부) 전동렬 (조) 유준희 이경호
화학교육과	(교) 노태희 (부) 유재훈 채희권 홍훈기 (조) 정대홍
생물교육과	(교) 김영수 김희백 (부) 전상학 (조) 김재근 이준규
지구과학교육과	(교) 권병두 최승언 (부) 김찬중 최변각
체육교육과	(교) 강신복 김동진 김선진 신인식 이애주 전태원 정응근 정철수 정청희 (부) 강준호 김연수 나영일 (조) 박일혁 송욱

**생활과학대학**

(직급 및 가나다순)

학과명	교수명단
소비자아동학부	(교) 여정성 옥선화 이기영 이기춘 이순형 한경혜 (부) 김난도 최현자 (조) 나종연 진미정 (전) 박혜준 (기조) 이강이
식품영양학과	(교) 권훈정 백희영 이연숙 지근억 최혜미 황인경 (조) 권영혜 윤지현
리류학과	(교) 김민자 남윤자 박정희 유효선 이은영 최정화 (조) 이유리 하지수

**수의과대학**

(직급 및 가나다순)

학과명	교수명단
수의학과	(교) 권오경 김대용 김선중 류판동 박용호 박재학 양일석 우희중 윤여성 윤희정 이문한 이영순 이인세 이장현 이창우 이항 이홍식 조명행 채찬희 최민철 (부) 강경선 김중남 류덕영 박봉균 서강문 성제경 유한상 윤정희 윤화영 (조) 이병천 박세창 신남식 이소영 황철용 (전) 김완희

**약학대학**

(직급 및 가나다순)

학과명	교수명단
약학과	(교) 고광호 김규원 김득준 김영준 김영철 김진웅 박정일 서영준 오우택 이명걸 이승기 이지우 정진호 천문우 (부) 김상건 김상희 신완규 이미옥 이병훈 (조) 송준명 신영기 오정미 (전) 권성원 성상현
제약학과	(교) 강삼식 강창울 김성훈 김영식 김종국 마응천 서영거 서영배 심창구 윤혜숙 이봉진 장일무 주상섭 최응칠 한용남 (부) 김대덕 박형근 변영로 신종현 정석재

**음악대학**

(직급 및 가나다순)

학과명	교수명단
성악과	(교) 김성길 박미혜 윤현주 (부) 강병운 김인혜 박세원 서혜연 (전) 박현재
작곡과	(교) 민은기 이석원 임현정 장정익 정태봉 (부) 김덕기 이돈웅 이신우 (조) 오희숙 전상직 최우정 Roland Breitenfeld
기악과	(교) 김귀현 김민 김영률 김영욱 김형배 문익주 백청심 신수정 윤영숙 장형준 (부) 최은식 (조) 주희성 최경환 최희연 (전) 백주영 윤혜리
국악과	(교) 강사준 김정자 황준연 (조) 김승근 오용록 임재원

## 의과대학

(직급 및 가나다순)

## 학과명

## 교수명단

의학과

(교) 강순범 강홍식 고영률 구경회 국윤희 권준수 김광명 김광현 김규한 김기봉 김기환 김동규 김동명 김명석 김병국 김병일 김상준 김석현 김석화 김선희 김성권 김성덕 김성연 김승협 김영수 김영환 김용식 김용식 김용진 김우기 김우선 김우호 김원곤 김유영 김의중 김익상 김인규 김인원 김일한 김재형 김전 김정구 김종선 김종성 김주현 김중곤 김진규 김철우 김철호 김현집 김현희 김희중 김희찬 노동영 노재규 노정일 문신용 민경업 민경원 민병구 민양기 박경수 박경찬 박광석 박귀원 박명희 박병주 박상철 박신양 박성혜 박성희 박영배 박인에 박재갑 박재형 박종완 박찬일 박철규 방영주 백구현 백재승 서경석 서유현 서인석 서정기 서정선 서정욱 성명훈 성상철 성숙환 손대원 송영욱 송용상 송인성 신상구 신영수 신희영 신희철 심영수 안윤옥 안혁 안효섭 양세원 엄용의 연경모 오명돈 오병희 오승근 오용석 왕규창 우종인 위원왕 유근영 유영석 유철규 윤병우 윤보현 윤여규 윤용범 윤용수 윤재일 은희철 이건욱 이광우 이국현 이동수 이명철 이병란 이상은 이상철 이성철 이왕재 이윤성 이윤호 이은식 이정렬 이정빈 이정상 이진학 이철희 이춘기 이흥규 이환종 이효석 이효표 임정기 장기현 장선오 장자준 전범석 전용성 정도연 정명희 정문상 정성은 정준기 정진엽 정진호 정천기 정해일 정현재 정홍근 정흠 정희원 조광현 조맹제 조병규 조보연 조사선 조상현 조수철 조수현 조한외 차중익 차창용 채종일 최강원 최명식 최병인 최영민 최용 최윤식 최인호 최정연 최중환 최황 하성환 하일수 한규섭 한대희 한민희 한성구 한준구 한진석 한태륜 허대석 허봉렬 호원경 홍성태 황덕호 황상의 황용승 황응수 황정민 (부) 강경훈 강대희 강용구 곽상인 권성택 김기중 김상운 김상은 김상정 김수용 김영태 김용익 김용철 김용태 김재성 김종효 김주한 김형호 김희수 도상환 류인균 묵인희 박노현 박성섭 박용양 박재현 박정규 방문석 배은정 백남종 서길준 서대현 서창석 성승용 송정환 신동훈 신민섭 안규리 안용민 양한광 오승하 오창완 윤희덕 이동순 이명철 이석호 이승택 이재서 이종석 이춘택 임석아 임영진 장인진 전상훈 전종관 정두현 정준호 조태준 채인호 최기영 최민호 하규섭 한정호 한호성 황영일 (조) 강위생 구분권 김지수 김진희 이동섭 장태안 장혁재 전양숙 조광현 최은영 (전) 이영호 (기교) 김효수 박성호 유태우 윤성수 이동수 이상건 정재민 정중기 정진욱 정희순 (기부) 강승백 구자록 구진모 김경환 김나영 김만호 김명아 김범준 김승기 김연수 김재원 김종수 김태유 김한수 김혜선 남현우 노영진 문우경 민성원 박규주 박기호 박도준 박중신 백선하 손환철 신찬수 오승준 우홍균 유희곤 윤강섭 윤정환 윤종현 이경민 이국래 이동호 이상형 이용석 이은봉 이재호 이정상 이정원 이지호 임춘수 장미수 장학 장학철 정선근 정영섭 정희연 조태준 진홍률 채동완 최동주 하종원 홍윤철 (기조) 강병철 강성권 강성범 강재승 강창현 고재성 곽영호 구승엽 구자원 권오기 권오상 김광일 김기웅 김병관 김봉년 김상완 김상현 김성원 김성준 김성준 김성현 김영훈 김옥주 김용진 김용한 김윤 김윤준 김인아 김정은 김종민 김주성 김지은 김지현 김태균 김태우 김한석 김현경 김홍빈 나기영 류지곤 문경철 박경석 박경운 박교훈 박규형 박소연 박수경 박영주 박중

두 박준동 배영미 변석수 성창규 신은희 신좌섭 안순현 안원식 염진섭 예상규 오세일  
 오주한 유경상 유정준 유희정 윤상용 윤인영 윤창진 이경호 이동영 이시욱 이원우 이  
 윤종 이재성 이정민 이준호 이중의 이태승 이학중 임재준 임청 장봉순 장윤석 장진영  
 전주홍 전혜원 정경천 정상기 정성구 정진행 정현 조남혁 조비룡 조진환 차주희 최성  
 원 최은화 최정아 최진욱 한대희 한문구 한성희 한영근 한원식 함봉진 허승철 홍성환  
 황진혁 (기전) 박영수 심순섭 양혜란 이혁준 정지봉 조영석 최성희

**보건대학원**

(직급 및 가나다순)

학과명	교수명단
보건학과	(교) 권순만 문옥륜 양봉민 이선자 이승욱 정혜원 조병희 (부) 김창엽 김호 정효지 (조) 손현석 조성일 조영태
환경보건학과	(교) 백도명 (부) 이승묵 조경덕 (조) 고광표 최경호

**행정대학원**

(직급 및 가나다순)

학과명	교수명단
행정학과	(교) 김광웅 김동건 김동욱 김병섭 김신복 노경수 노화준 방석현 오연천 이달근 이승 종 정용덕 정홍익 최병선 최종원 홍준형 (부) 김준기 박상인 박정훈 우지숙 임도빈 (조) 금현섭 김상현 박순애 이석원 정광호

**환경대학원**

(직급 및 가나다순)

학과명	교수명단
환경계획학과	(교) 김성수 김정욱 김형국 이도원 이동수 이영인 이정전 임강원 최막중 (부) 김광중 이 희연 전상인 (조) 윤순진 이영성
환경조경학과	(교) 김기호 박종화 양병이 유병림 황기원 (조) 성종상

**국제대학원**

(직급 및 가나다순)

학과명	교수명단
국제학과	(교) 김종섭 문휘창 박세일 박태호 백진현 (부) 김현철 문우식 이근 정영록 한영혜 (조) 박철희 박태균 신성호 안덕근 은기수 정종호 조영남

## 치의학대학원

(직급 및 가나다순)

학과명	교수명단
치의학과	(교) 고재승 김각균 김관식 김명기 김명진 김영구 김종철 김종수 김창희 김태우 김현만 민병무 배광식 백기석 백대일 손호현 양재호 엄정문 엄광원 이상훈 이재봉 이종호 임범순 장영일 정종평 정필훈 최순철 한세현 한수부 허성주 홍삼표 (부) 고흥섭 곽재영 구영 김홍희 류인철 류현모 박경표 백승학 백승호 백정화 이삼선 이용근 이용무 이장희 이재일 이진 장기택 정진우 조병훈 최영님 최진영 한중석 허민석 (조) 금기연 김성균 김성훈 김영재 김정욱 김현덕 김현정 김홍기 노상호 명훈 박윤정 박희경 배광학 서병무 설양조 안석준 양형철 오석배 우경미 이상훈 이성중 이승복 이승표 이신재 이우철 이원진 이인복 임영준 장미숙 조재진 진보형 최봉규 최세영 한승현 홍성두 황순정 (기조) 김태일

\*(교): 교수, (부): 부교수, (조): 조교수, (기교): 기금교수, (기부): 기금부교수, (기조): 기금조교수

### 3. 명예교수 명단(2006. 4. 4 현재)

(\*표는 사망, 가나다순)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강길수	사범대학	국채호*	약학대학	김두중*	의과대학
강두식	인문대학	권숙일	자연과학대학	김두희*	사회과학대학
강만식	자연과학대학	권순형	미술대학	김명국	치과대학
강명규	사회과학대학	권영대*	문리과학대학	김명렬	인문대학
강석영*	의과대학	권영명	자연과학대학	김문기	농업생명과학대학
강승호*	의과대학	권영성	법과대학	김문상*	공과대학
강신택	행정대학원	권윤방	사범대학	김문식	농업생명과학대학
강영선	자연과학대학	권이혁	의과대학	김문한	공과대학
강운경*	음악대학	권종국	수의과대학	김문협	농업생명과학대학
강찬균	미술대학	권태준	환경대학원	김박광	약학대학
강춘식	공과대학	권혁춘	치과대학	김방한*	인문대학
강현두	사회과학대학	기용숙*	의과대학	김병각	약학대학
강현삼	자연과학대학	김갑덕*	농업생명과학대학	김병국	인문대학
고광욱*	의과대학	김경동	사회과학대학	김봉균*	자연과학대학
고광출	농업생명과학대학	김경식*	의과대학	김봉우*	공과대학
고명삼	공과대학	김계숙*	사범대학	김봉구*	인문대학
고병익*	인문대학	김광수	사범대학	김상기*	문리과학대학
고석구*	인문대학	김광호	인문대학	김상문	자연과학대학
고석원	공과대학	김교만*	미술대학	김상용	공과대학
고영근	인문대학	김규식	치과대학	김상인	의과대학
고영복	사회과학대학	김극천	공과대학	김상주	공과대학
고영소	자연과학대학	김기두*	법과대학	김상호*	사회과학대학
고윤석	자연과학대학	김낙두	약학대학	김석도	인문대학
고재균	농업생명과학대학	김노경	의과대학	김석환*	의과대학
고창순	의과대학	김노수	공과대학	김성근	사범대학
고학균	농업생명과학대학	김동순*	치과대학	김성련	생활과학대학
곽윤직	법과대학	김동암	농업생명과학대학	김성삼*	자연과학대학
곽일용*	의과대학	김동원	공과대학	김성태	음악대학
구영록*	사회과학대학	김동익*	의과대학	김성환*	의과대학
구인환	사범대학	김동훈	공과대학	김세원	사회과학대학
구정희*	자연과학대학	김동희	법과대학	김수진	자연과학대학



김수철	치과대학	김인달*	의과대학	김진태	치과대학
김수태	의과대학	김인숙	인문대학	김진호	의과대학
김순열	음악대학	김일철	사회과학대학	김진환	의과대학
김승옥	의과대학	김재극*	공과대학	김채운	사회과학대학
김승원	의과대학	김재근*	공과대학	김철수	법과대학
김시준	인문대학	김재욱	농업생명과학대학	김철위	치과대학
김시황	의과대학	김재주	자연과학대학	김철자	인문대학
김식현	경영대학	김정규	음악대학	김철준*	인문대학
김신근	약학대학	김정근	보건대학원	김태	미술대학
김신일	사범대학	김정년	경영대학	김태길	인문대학
김안제	환경대학원	김정수*	자연과학대학	김학주	인문대학
김양배	약학대학	김정순	보건대학원	김해동*	행정대학원
김연식	공과대학	김정용	의과대학	김해리	생활과학대학
김연식	사범대학	김정자	미술대학	김현옥	농업생명과학대학
김영국*	사회과학대학	김정진*	사범대학	김현창	인문대학
김영균	의과대학	김정환	자연과학대학	김형걸	공과대학
김영민	의과대학	김제완	자연과학대학	김형규*	사범대학
김영수	치과대학	김제필	자연과학대학	김혜경	음악대학
김영은*	약학대학	김제훈*	천연물과학연구소	김호징	자연과학대학
김영택	공과대학	김종배	치과대학	김호탁	농업생명과학대학
김영해	치과대학	김종상	공과대학	김흥기*	의과대학
김완진	인문대학	김종서	사범대학	김효경	공과대학
김용구	사회과학대학	김종영*	미술대학	김효철	공과대학
김용일	의과대학	김종운*	인문대학	김훈수	자연과학대학
김용직	인문대학	김종찬	자연과학대학	김희춘*	공과대학
김용진	음악대학	김종현	사회과학대학	나세진*	의과대학
김우겸	의과대학	김종환	의과대학	나용준	농업생명과학대학
김운태	행정대학원	김주완	의과대학	나운용*	약학대학
김원룡*	인문대학	김준민	사범대학	나종일	인문대학
김원복*	음악대학	김준섭*	인문대학	나형용	공과대학
김원수	경영대학	김준용	공과대학	남기용*	의과대학
김유성	법과대학	김준호	자연과학대학	남세진*	사회과학대학
김윤식	인문대학	김중술	의과대학	남중희	농업생명과학대학
김은전	사범대학	김중한*	법과대학	남치주	수의과대학
김응서	공과대학	김진균*	사회과학대학	노관택	의과대학
김응진	의과대학	김진복*	의과대학	노병호*	의과대학
김응태	사범대학	김진세	인문대학	노수현*	미술대학
김인	사회과학대학	김진영	의과대학	노오현	공과대학

노유희	환경대학원	박성우*	농업생명과학대학	백낙청	인문대학
노현모	자연과학대학	박세원*	미술대학	백낙호	음악대학
노희덕	사범대학	박세희	자연과학대학	백남원	보건대학원
동덕모*	사회과학대학	박순달	공과대학	백만기	의과대학
라현성*	사범대학	박순자	공과대학	백병동	음악대학
류순호	농업생명과학대학	박승재	사범대학	백상호	의과대학
마점술	수의과대학	박영문	공과대학	백운하	농과대학
명호진*	의과대학	박영일	농업생명과학대학	백충현	법과대학
모수미	생활과학대학	박영한	사회과학대학	변태섭	인문대학
문양수	인문대학	박옥줄	사범대학	변형운	사회과학대학
문용	사범대학	박용안	자연과학대학	부경생	농업생명과학대학
문우상	인문대학	박용현	사범대학	부수언	미술대학
문재유	농업생명과학대학	박우희	사회과학대학	서경필	의과대학
문창규	약학대학	박응용*	자연과학대학	서계숙	음악대학
문학진	미술대학	박응복	수의과대학	서돈각	법과대학
문형노*	의과대학	박인원	자연과학대학	서봉연	사회과학대학
민두기*	인문대학	박정호	간호대학	서세옥	미술대학
민병수	인문대학	박종홍*	문리과대학	서우석	음악대학
민병일	치과대학	박중현	공과대학	서원우*	법과대학
민석홍*	인문대학	박친웅	의과대학	서익수	수의과대학
민철홍	미술대학	박천경	공과대학	서정훈	치과대학
민현기	의과대학	박충집*	문리과대학	석경징	인문대학
민호기*	자연과학대학	박태식	농업생명과학대학	석세일	의과대학
박갑수	사범대학	박태원	치과대학	선우양국	치과대학
박길수*	의과대학	박평주*	공과대학	선우중호	공과대학
박길준	사범대학	박형달	인문대학	성백능	자연과학대학
박남식	인문대학	박형석	자연과학대학	성백인	인문대학
박노경	음악대학	박혜일*	공과대학	성재기	수의과대학
박동규	인문대학	박홍규*	인문대학	성호경*	의과대학
박동서*	행정대학원	박홍래*	자연과학대학	소광희	인문대학
박만기	약학대학	박환덕	인문대학	손동수	치과대학
박명규	농업생명과학대학	박효근	농업생명과학대학	손봉호	사범대학
박민호	공과대학	박희인	자연과학대학	손성희	치과대학
박병호	법과대학	박희진	인문대학	손치무	자연과학대학
박봉식	사회과학대학	반성환	농업생명과학대학	송계원	농업생명과학대학
박봉열*	자연과학대학	배광준	공과대학	송낙헌	인문대학
박상대	자연과학대학	배복석*	사회과학대학	송동준	인문대학
박상조*	공과대학	배재식*	법과대학	송병락	사회과학대학

송해균	농업생명과학대학	양승춘	미술대학	윤동호	의과대학
송희성	자연과학대학	양원식	치과대학	윤명로	미술대학
신국현	약학대학	양철학	자연과학대학	윤석철	경영대학
신동소	농업생명과학대학	양홍석	공과대학	윤세철	사범대학
신면우	의과대학	엄태정	미술대학	윤수한	치과대학
신영기*	공과대학	여정동	사회과학대학	윤옥경	자연과학대학
신영상	미술대학	엄영하*	공과대학	윤용탁	사범대학
신용하	사회과학대학	오만식*	사회과학대학	윤이흠	인문대학
신윤경*	공과대학	오병남	인문대학	윤인호*	사범대학
신익성*	인문대학	오봉국	농업생명과학대학	윤일선*	의과대학
신태호	인문대학	오상락*	경영대학	윤장섭	공과대학
신희명	사범대학	오석홍	행정대학원	윤재한	자연과학대학
심길순*	약학대학	오인석	인문대학	윤정섭*	공과대학
심명호	사범대학	오진섭*	의과대학	윤종구	의과대학
심병구	경영대학	오현우	인문대학	윤홍식	자연과학대학
심보성*	의과대학	옥종화*	수의과대학	이경숙	음악대학
심영근	농업생명과학대학	왕인근*	농업생명과학대학	이경식	인문대학
심재기	인문대학	우건석	농업생명과학대학	이계순	사범대학
심재욱	농업생명과학대학	우규환	사범대학	이계호	농업생명과학대학
심재형	자연과학대학	우범식*	공과대학	이관용	사회과학대학
심정섭	공과대학	우보명	농업생명과학대학	이광규	사회과학대학
심종섭	농업생명과학대학	우원식	천연물과학연구소	이광노	공과대학
심현섭	법과대학	우인근	천연물과학연구소	이광웅	자연과학대학
안건용	농업생명과학대학	우종하*	약학대학	이구철	자연과학대학
안병직	사회과학대학	우형주	공과대학	이국주*	의과대학
안병희	인문대학	원윤수	인문대학	이균상*	공과대학
안수길	공과대학	원종수*	공과대학	이기문	인문대학
안수한	공과대학	원호택	사회과학대학	이기석	사범대학
안승요	생활과학대학	위상규	공과대학	이기영*	의과대학
안원영	농업생명과학대학	유경로*	사범대학	이기원	음악대학
안철호	공과대학	유경채*	미술대학	이기준	공과대학
안태완	공과대학	유근준	미술대학	이낙주	공과대학
안해균	행정대학원	유달영*	농업생명과학대학	이남수	음악대학
안형규*	치과대학	유동수	치과대학	이남영	인문대학
안형일	음악대학	유종덕*	치과대학	이덕용	의과대학
안휘준	인문대학	유태열	음악대학	이돈희	사범대학
양병우*	인문대학	유훈	행정대학원	이동녕	공과대학
양승규	법과대학	윤덕노	의과대학	이동승	사범대학

이두현	사범대학	이수호	자연과학대학	이인호	인문대학
이량*	공과대학	이순원	생활과학대학	이일해	자연과학대학
이만갑	사회과학대학	이순형	의과대학	이장낙	수의과대학
이맹성	사범대학	이승녕*	문리과대학	이장호	사회과학대학
이명복*	의과대학	이승규*	농과대학	이재성	공과대학
이명종	치과대학	이승우	치과대학	이재홍	의과대학
이명학	음악대학	이승원	공과대학	이정균	의과대학
이문득	공과대학	이승훈*	의과대학	이정민	인문대학
이문호*	의과대학	이시백	보건대학원	이정식	치과대학
이민성	사범대학	이양후	농과대학	이정주	자연과학대학
이민호	인문대학	이영균*	의과대학	이정한	공과대학
이민호	자연과학대학	이영기	사범대학	이정호	경영대학
이민화	약학대학	이영덕	사범대학	이정희*	음악대학
이범제	사범대학	이영배	공과대학	이제구*	의과대학
이병건	인문대학	이영소	농업생명과학대학	이종각	공과대학
이병근	인문대학	이영옥	치과대학	이종상	미술대학
이병도*	문리과대학	이영우	의과대학	이종수*	사범대학
이병일	농업생명과학대학	이영택*	의과대학	이종욱	의과대학
이병찬*	인문대학	이영환	보건대학원	이종훈	치과대학
이병한	인문대학	이왕규*	약학대학	이주식	자연과학대학
이부영	의과대학	이용빈*	농업생명과학대학	이준섭	수의과대학
이사계	자연과학대학	이용주*	사범대학	이지호*	사범대학
이상국	의과대학	이용준	경영대학	이진용	의과대학
이상만	자연과학대학	이용필*	사범대학	이질현	농업생명과학대학
이상복	의과대학	이용희	사회과학대학	이찬*	사회과학대학
이상섭	약학대학	이우영*	자연과학대학	이창복*	농업생명과학대학
이상옥	인문대학	이용직*	사범대학	이창업	수의과대학
이상익	사범대학	이원순	사범대학	이춘근*	치과대학
이상춘*	음악대학	이원식*	사범대학	이춘영	농업생명과학대학
이상택	인문대학	이유신	의과대학	이충웅	공과대학
이상희	사회과학대학	이윤영	자연과학대학	이태녕	사범대학
이선주*	약학대학	이은방	약학대학	이태로	법과대학
이선형	치과대학	이은웅	농업생명과학대학	이택식*	공과대학
이성균	음악대학	이응백	사범대학	이필우	농업생명과학대학
이성재	음악대학	이의철	사회과학대학	이한구*	의과대학
이성진	사범대학	이익섭	인문대학	이해경	공과대학
이성호	의과대학	이인규	자연과학대학	이현구	공과대학
이수성	법과대학	이인영	음악대학	이현복	인문대학

이현재	사회과학대학	장상호	사범대학	정일영	공과대학
이혜구	음악대학	장석진	인문대학	정종률	자연과학대학
이혜수	생활과학대학	장세현	자연과학대학	정지영	인문대학
이호정	법과대학	장세희*	자연과학대학	정지웅	농업생명과학대학
이홍근	보건대학원	장신요*	의과대학	정진우	음악대학
이홍석	농업생명과학대학	장완식	치과대학	정진홍	인문대학
이홍우	사범대학	장우현	의과대학	정창국	수의과대학
이화영	공과대학	장윤석	의과대학	정창섭	미술대학
이환	인문대학	장익태	치과대학	정창주	농업생명과학대학
이희근	공과대학	장인협	사회과학대학	정창현	공과대학
이희승*	문리과대학	장준성	자연과학대학	정창희	자연과학대학
이희영*	의과대학	장회익	자연과학대학	정창희	자연과학대학
임경빈*	농업생명과학대학	전광용*	인문대학	정하우	농업생명과학대학
임경순	농업생명과학대학	전봉초	음악대학	정해문	자연과학대학
임변장	사범대학	전상범	사범대학	정회갑	음악대학
임상전*	공과대학	전용원	공과대학	정후섭	농업생명과학대학
임선옥	농업생명과학대학	전윤성*	수의과대학	정희석	농업생명과학대학
임성삼	치의학대학원	전재근	농업생명과학대학	정희철*	법과대학
임승권	사범대학	전제옥*	인문대학	조대경	사회과학대학
임원자	생활과학대학	정경균	보건대학원	조동일	인문대학
임원택*	사회과학대학	정광현*	법과대학	조두영	의과대학
임응극	공과대학	정기준	사회과학대학	조명한	사회과학대학
임인재	사범대학	정기형	공과대학	조백현	농과대학
임재은	보건대학원	정문식	보건대학원	조병태	인문대학
임정순*	의과대학	정범모	사범대학	조석준	행정대학원
임종철	사회과학대학	정병휴*	사회과학대학	조선휘	공과대학
임창운	치과대학	정봉협	공과대학	조순	사회과학대학
임창형	수의과대학	정신모	공과대학	조영제	미술대학
임형빈*	농업생명과학대학	정성태	사범대학	조완규	자연과학대학
장가용	의과대학	정세구	사범대학	조용섭	농업생명과학대학
장남기	사범대학	정수진	공과대학	조윤상	약학대학
장덕순*	인문대학	정양은*	사회과학대학	조윤성	약학대학
장두환*	수의과대학	정연태*	사범대학	조준학	인문대학
장명옥*	가정대학	정영일	사회과학대학	조창섭	사범대학
장병길	인문대학	정영호*	자연과학대학	조충호	수의과대학
장병임	사회과학대학	정원근*	약학대학	주근원	의과대학
장봉린	의과대학	정원식	사범대학	주동운*	의과대학
장사훈*	음악대학	정인준	공과대학	주봉규	농업생명과학대학

주종원	공과대학	최승희	인문대학	허문회	농업생명과학대학
지명렬	인문대학	최완식	인문대학	허승일	사범대학
지제근	의과대학	최웅	공과대학	허웅*	인문대학
지창열*	자연과학대학	최의순	미술대학	허인목	의과대학
지철근	공과대학	최재희*	인문대학	허정	보건대학원
지형준	천연물과학연구소	최종기	행정대학원	허창운	인문대학
진교훈	사범대학	최종태	미술대학	현기순	생활과학대학
차경수	사범대학	최종태	경영대학	현병구	공과대학
차문호*	치과대학	최홍기	사회과학대학	현신규*	농업생명과학대학
차병권	사회과학대학	최희인*	수의과대학	현재선	농업생명과학대학
차상원*	인문대학	추광영	사회과학대학	현정준	자연과학대학
차인석	인문대학	표현구*	농과대학	현해은	음악대학
차재호	사회과학대학	피천득	사범대학	홍강의	의과대학
차주환	인문대학	하두봉	자연과학대학	홍문화	천연물과학연구소
채동규	약학대학	하영칠	자연과학대학	홍성목	공과대학
채영암	농업생명과학대학	한계진	인문대학	홍성일	공과대학
채우기	사범대학	한구동*	약학대학	홍순복*	자연과학대학
채의순*	사범대학	한기언	사범대학	홍승오	인문대학
최계근*	공과대학	한대석*	약학대학	홍여신	간호대학
최국진	의과대학	한만청	의과대학	홍원탁	사회과학대학
최규완	의과대학	한문식*	의과대학	홍준기*	공과대학
최규원*	자연과학대학	한병훈	천연물과학연구소	홍창의	의과대학
최기원	법과대학	한봉희*	공과대학	황동규	인문대학
최기철*	사범대학	한상복	사회과학대학	황만익	사범대학
최길수	의과대학	한송엽	공과대학	황성명*	치과대학
최대권	법과대학	한수남	수의과대학	황윤석	인문대학
최만린	미술대학	한심석*	의과대학	황재기	사범대학
최명	사회과학대학	한영우	인문대학	황적륜	사범대학
최병두	자연과학대학	한용철*	의과대학	황적인	법과대학
최병희	농업생명과학대학	한우근*	인문대학	황정규	사범대학
최상목	치과대학	한인규	농업생명과학대학	황중홀	공과대학
최상철	환경대학원	한전숙	인문대학	황찬호*	인문대학
최선진	치의학대학원	한홍율	수의과대학	황희용	공과대학
최성배*	의과대학	한희영	경영대학		
최순봉	인문대학	함의근	의과대학		

## 4. 전직교수 명단(2006. 9. 1 현재)

## 문리과대학

(직급순)

직급	성명	전공	직급	성명	전공
교수	이태규	화학	교수	박의현	미학
교수	김두현	철학	교수	김정록	미학
교수	박철재	물리학	교수	안호상	철학
교수	이병기	국문학	교수	이상백	사회학
교수	신남철	철학	교수	최정우	영문학
교수	이선근	정치학	교수	정래동	중문학
교수	류홍렬	국사학	교수	민태식	철학
교수	권중휘	영문학	교수	고형곤	철학
교수	김선기	언어학	교수	김구경	중문학
교수	선우기	생물학	교수	방종현	국문학
교수	김성희	정치학	교수	김종흡	종교학
교수	윤갑병	수학	교수	서두수	
교수	권영대	물리학	교수	이인영	국사학
교수	육지수	지리학	교수	최인호	
교수	전해중	동양사학	교수	김순경	화학
교수	최윤식	수학	교수	조순탁	물리학
교수	손진태	국사학	교수	이승녕	국어학
교수	이양하	영문학	교수	문영현	체육학
교수	신영목	수학	교수	박양운	종교학
교수	김종무	국사학	교수	이희승	국어학
교수	최규남	물리학	교수	박충집	영문학
교수	조운제	국문학	교수	이병도	국사학
교수	이진숙	심리학	교수	김상기	동양사학
교수	신기석	정치학	교수	박준규	
교수	이회영	독문학	부교수	임학수	
교수	김진섭	독문학	부교수	정규만	종교학
교수	손우성	불문학	부교수	남태경	동물학
교수	김태봉	화학	부교수	이입학	수학
교수	이종진	생물학	부교수	황성모	사회학
교수	박종홍	철학	부교수	엄규백	생물학
교수	이인기	철학	부교수	김삼규	독문학

부교수	김기완	체육학	조교수	홍임식	
부교수	김종철	물리학	조교수	고순덕	심리학
부교수	윤세원	물리학	조교수	박일경	정치학
부교수	양인기	물리학	조교수	김성칠	국사학
부교수	김도정	지리학	조교수	김영록	물리학
부교수	류응호	언어학	조교수	최병성	수학
부교수	신도성	정치학	조교수	곽복록	독문학
부교수	변시민	사회학	조교수	최일운	
부교수	하광철	수학	조교수	권경환	수학
부교수	조가경	철학	조교수	민광식	물리학
부교수	구범모	정치학	전임강사	김영창	
조교수	김일출	동양사학	전임강사	김환수	
조교수	김기림	국문학	전임강사	한남구	독문학
조교수	허 준	국문학	전임강사	양주동	국문학
조교수	이명선	중문학	전임강사	김내수	
조교수	안강원		전임강사	김경수	정치학
조교수	양희수	사회학	전임강사	노수원	지질학
조교수	강대량	국사학	전임강사	강우형	물리학
조교수	장성언	영문학	전임강사	양서영	동물학
조교수	성백선	심리학	전임강사	한준택	물리학
조교수	서임수	정치학	전임강사	손원록	
조교수	이기억	물리학	전임강사	장하구	독문학
조교수	이동녕	물리학	전임강사	조규동	
조교수	장위돈	정치학	전임강사	오태호	
조교수	김용호		전임강사	정인조	식물학
조교수	이분녕	심리학	전임강사	박영호	
조교수	한위리		전임강사	김영진	동물학
조교수	홍성덕		전임강사	민태영	
조교수	김옥준	지질학	전임강사	김이문	
조교수	한춘섭		전임강사	신병우	지질학
조교수	최완복	생물학	전임강사	박의창	
조교수	강주한	영문학	전임강사	김재룡	서양사학
조교수	이정우		전임강사	최병환	
조교수	이주천	물리학	전임강사	김우창	영문학



## 상과대학

(직급순)

직급	성명	전공	직급	성명	전공
교수	박용하	경제학	부교수	김노겸	
교수	김척희	경제학	부교수	최성준	
교수	권오익	경영학	부교수	김용하	
교수	정규창	경제학	부교수	이해동	경제학
교수	이 일	영어	부교수	강지형	경영학
교수	유진순	경제학	부교수	나용배	경영학
교수	김순식	회계학	조교수	이영수	
교수	김효록	경영학	조교수	전용관	
교수	김해균	영어	조교수	한홍재	
교수	권세원	철학	조교수	이순기	경제학
교수	박희성	철학	조교수	김창주	경제학
교수	이상구	경제학	조교수	홍 우	경제학
교수	조용만		조교수	이기준	경제학
교수	정래길		조교수	박찬수	
교수	이원학	국문학	조교수	윤향노	
교수	현성진	러시아어	조교수	정영술	통계학
교수	고승제	경제학	조교수	이지성	
교수	박동묘	농경제학	조교수	오학근	경제학
교수	이상훈	회계학	조교수	유봉노	경영학
교수	박희범	경제학	조교수	한동호	경영학
교수	최문환	경제학	조교수	조기준	경제학
교수	방갑수	경영학	조교수	권명수	
교수	황병준	경영학	조교수	김영식	
부교수	이도웅		조교수	변홍찬	
부교수	오응삼		조교수	김용갑	경제학
부교수	유철준	상법	조교수	이근수	영어
부교수	구병수	헌법	조교수	강빈구	경영학
부교수	이승윤	경제학	전임강사	정명섭	
부교수	최인갑		전임강사	이준근	
부교수	박이순		전임강사	박천석	경제학
부교수	장홍두	민법	전임강사	서상용	경영학
부교수	서정갑	상법	전임강사	김재상	
부교수	홍성유	경제학	전임강사	노병탁	회계학

## 인문대학

(퇴임일자순)

직급	성명	전공	직급	성명	전공
교수	김용섭	국사학	교수	장덕순	국문학
부교수	구기성	독문학	교수	박시인	영문학
교수	차상원	중문학	교수	황찬호	영문학
조교수	김석연	국문학	교수	김봉구	불문학
교수	박상현	철학	교수	김원룡	고고미술사학
교수	신사훈	종교학	교수	윤명로	철학
교수	고병익	동양사학	교수	최학근	국문학
교수	조성지	영문학	교수	정한모	국문학
교수	김준섭	철학	교수	김철준	국사학
조교수	이명재	독문학	교수	오현우	불문학
교수	최재희	철학	교수	장왕록	영문학
교수	송 옥	영문학	교수	양병우	서양사학
부교수	국정효	영문학	교수	고창범	독문학
교수	한우근	국사학	교수	신익성	언어학
교수	장기근	중문학	교수	김광남	불문학
교수	정명환	불문학	교수	민석홍	서양사학
교수	허형근	독문학	교수	변태섭	국사학
조교수	최승언	불문학	교수	김방한	언어학
교수	정병욱	국문학	교수	김한근	영문학
교수	문상득	영문학	교수	지명렬	독문학
교수	전제옥	영문학	교수	나종일	서양사학
조교수	길희성	철학	교수	임영방	미학
교수	허 웅	언어학	교수	강두식	독문학
교수	장병길	종교학	교수	이민호	서양사학
교수	박홍규	철학	교수	한전숙	현상학
교수	고석구	영문학	교수	정진	철학
교수	전광용	국문학	교수	문우상	영문학
교수	안상진	철학	교수	김광호	영문학
교수	이휘영	불문학	교수	양동휘	영문학
교수	이종철	국문학	교수	나학진	종교학
교수	백기수	미학	교수	이병찬	독어학
교수	김태길	철학	교수	홍인표	중문학
교수	차주환	중어중문학	조교수	천기태	독문학
교수	강대건	영문학	교수	장석진	언어학
교수	이상철	철학	교수	김중운	영문학

교수	이 환	불문학	교수	이상옥	영어영문학
교수	이갑규	독문학	교수	김영무	영어영문학
교수	김석산	영문학	교수	고영근	국어국문학
교수	이기문	국문학	교수	최순봉	독어독문학
교수	김진세	국문학	교수	정지영	불어불문학
교수	김완진	국문학	교수	오인석	서양사학
교수	최완식	중문학	교수	이현복	언어학
교수	조병태	영문학	교수	박희진	영어영문학
교수	이인호	서양사학	교수	최승희	국사학
교수	송낙현	영어영문학	교수	이익섭	국어국문학
교수	김인숙	영어영문학	교수	심재기	국어국문학
교수	김용직	국어국문학	교수	한계진	국어국문학
교수	안병희	국어국문학	교수	김윤한	언어학
교수	민두기	동양사학	교수	백낙청	영어영문학
교수	홍승오	불어불문학	교수	정진홍	종교학
교수	김철자	독어독문학	교수	한영우	국사학
교수	박환덕	독어독문학	교수	이상택	국어국문학
교수	이병건	영어영문학	교수	황동규	영어영문학
교수	이병한	중어중문학	교수	박동규	국어국문학
교수	차인석	철학	교수	이남영	철학
교수	김여수	철학	교수	조동일	국어국문학
조교수	윤혜석	영어영문학	교수	이병근	국어국문학
교수	김학주	중어중문학	교수	유평근	불어불문학
교수	성백인	언어학	교수	심재룡	철학
교수	권철근	노어노문학	교수	김병국	국어국문학
교수	조준학	영어영문학	교수	이정민	언어학
교수	소광희	철학	교수	김명렬	영어영문학
교수	송동준	독어독문학	교수	박남식	영어영문학
교수	박형달	언어학	교수	허창운	독어독문학
교수	김석도	독어독문학	교수	윤이흠	종교학
교수	신태호	독어독문학	교수	안휘준	고고미술사학
교수	원윤수	불어불문학	교수	황윤석	독어독문학
교수	김현창	서어서문학	교수	오병남	미학
부교수	석경징	영어영문학	부교수	이인성	불어불문학
교수	이경식	영어영문학	교수	문양수	언어학
교수	김시준	중어중문학	교수	천승걸	영어영문학
교수	민병수	국어국문학	교수	임효재	고고미술사학
교수	김윤식	국어국문학			

## 사회과학대학

(퇴임일자순)

직급	성명	전공	직급	성명	전공
교수	이용희	외교학	교수	최흥기	사회학
부교수	오갑환	사회학	교수	동덕모	외교학
교수	민병태	정치학	교수	차병권	경제학
조교수	최범중	경제학	교수	변형운	경제학
교수	김유성	지리학	조교수	최창조	지리학
교수	임근수	신문학	교수	박재운	경제학
조교수	장현갑	심리학	교수	한완상	사회학
교수	이의철	심리학	교수	정종욱	외교학
교수	이해영	사회학	교수	고영복	사회학
교수	하상탁	사회복지학	교수	박봉식	외교학
교수	배복석	경제학	교수	이상희	신문학
교수	손계석	정치학	교수	김영국	정치학
교수	김두희	경제학	부교수	이각범	사회학
교수	김상호	지리학	교수	길승흠	정치학
교수	장병림	심리학	교수	여정동	외교학
교수	김규환	신문학	교수	김종현	경제학
교수	이만갑	사회학	교수	김채운	사회학
교수	박유봉	신문학	교수	조대경	심리학
교수	정한택	심리학	부교수	김태성	경제학
교수	박동원	지리학	교수	배무기	경제학
교수	임원택	경제학	교수	임종철	경제학
교수	이 찬	문화지리학	교수	이광규	인류학
교수	이현재	경제학	부교수	조인구	경제학
교수	이흥구	정치학	교수	강명규	경제학
교수	배성동	정치학	교수	서봉연	심리학
부교수	최창규	정치학	교수	김일철	사회학
교수	오만식	경제학	교수	차재호	심리학
교수	정병휴	경제학	교수	구영록	정치학
교수	정양은	심리학	부교수	최재필	경제학
교수	한승수	경제학	교수	남세진	사회복지학
교수	노재봉	외교학	교수	원호택	심리학
교수	조 순	경제학	교수	한상복	인류학
교수	김학준	정치학	교수	박우희	경제학
교수	장인협	사회복지학	교수	강현두	언론정보학
부교수	김남진	사회복지학	교수	안병직	경제학

교수	이장호	심리학	교수	송병락	경제학
교수	김경동	사회학	교수	박영한	지리학
교수	김용구	외교학	교수	홍원탁	경제학
교수	신용하	사회학	교수	추광영	언론정보학
교수	김진균	사회학	교수	정기준	경제학
교수	이관용	심리학	교수	정영일	경제학
교수	조명한	심리학	교수	최 명	정치학
교수	박준용	경제학	교수	김 인	지리학
교수	최일섭	사회복지학	교수	권태환	사회학
교수	김세원	경제학	교수	이문용	인류학

자연과학대학

(퇴임일자순)

직급	성명	전공	직급	성명	전공
교수	손치무	지질학	교수	홍순우	미생물학
조교수	이경배	수학	교수	김성삼	대기과학
교수	이민재	식물학	교수	김훈수	동물학
교수	김철수	물리학	교수	장세현	화학
교수	강영선	동물학	교수	민호기	수학
교수	신현천	수학	교수	성백능	물리학
교수	김원수	해양학	교수	정영호	식물학
조교수	장봉수	물리학	교수	정창희	대기과학
조교수	김종례	수학	교수	김정수	수학
조교수	권봉선	지질학	교수	박을룡	수학
부교수	남천우	물리학	교수	주광렬	화학
교수	최지훈	계산통계학	교수	이상만	지질학
교수	홍순복	물리학	교수	박봉렬	물리학
교수	민영기	천문학	교수	조완규	생물학
교수	이주식	미생물학	교수	현정준	천문학
교수	정봉일	지질학	교수	고윤석	물리학
교수	김봉균	지질학	교수	이수호	물리학
교수	정창희	지질학	교수	장세희	유기화학
교수	지창열	물리학	교수	이일해	위상수학
교수	이우한	수학	교수	김종식	수학
교수	최규원	화학	교수	윤옥경	수학
교수	정한영	계산통계학	교수	박홍래	통계학
교수	구정희	화학	교수	이우영	유기화학

교수	김준호	식물생태학	교수	김재주	통계학
교수	하영구	화학	교수	노현모	생명과학
교수	김제필	수학	교수	박상대	생명과학
교수	김호징	물리화학	교수	김상문	수리과학
교수	하두봉	분자생물학	조교수	박수중	지구환경과학
교수	김제완	물리학	교수	송희성	물리학
교수	박희인	지질과학	교수	이현구	수리과학
교수	이시우	천문학	교수	심재형	지구환경과학
교수	최병두	물리학	교수	윤홍식	지구환경과학
부교수	이용준	분자생물학	교수	장희익	물리학
교수	강만식	생물학	교수	정종률	지구환경과학
교수	고영소	수학	교수	박창범	지구환경과학
부교수	이기명	물리학	교수	강현삼	생명과학
조교수	황준묵	수학	교수	김수진	지구환경과학
교수	윤재한	수리과학	교수	채동호	수리과학
교수	박인원	화학	교수	최서영	수리과학
교수	권숙일	물리학	교수	최진호	화학
교수	하영칠	생명과학	교수	이광웅	생명과학
교수	이구철	물리학	교수	이사계	수리과학
교수	이정주	생명과학	교수	김정환	지구환경과학
교수	박세희	수리과학	교수	정해문	생명과학
부교수	강석진	수리과학	교수	최재천	생명과학
교수	이인규	생명과학	교수	김종찬	물리학
교수	박형석	화학	교수	양철학	화학
교수	이운영	화학	교수	최재경	수리과학
교수	이민호	물리학	교수	이조웅	화학
교수	장준성	물리학	교수	박순웅	지구환경과학
교수	권영명	생명과학	교수	이기화	지구환경과학
교수	박용안	지구환경과학			

**간호대학**

(퇴임일자순)

직급	성명	전공	직급	성명	전공
교수	홍여신	간호학	교수	김매자	간호학
교수	서문자	간호학	교수	이소우	간호학
교수	박정호	간호학			

## 경영대학

(퇴임일자순)

직급	성명	전공	직급	성명	전공
교수	소진덕	경영학	교수	김식현	경영학
교수	이용준	경영학	교수	이정호	경영학
교수	한희영	경영학	교수	최종태	경영학
교수	오상락	경영학	교수	윤석철	경영학
교수	심병구	경영학	교수	곽수일	경영학
교수	김정년	경영학	교수	신유근	경영학
교수	김원수	경영학			

## 공과대학

(1977년 이전은 직급순, 이후는 퇴임일자순)

직급	성명	전공	직급	성명	전공
교수	김동일	섬유공학	교수	최호영	야금학
교수	이종일	전기공학	교수	김재원	금속공학
교수	김재신	전기공학	교수	김희철	기계공학
교수	이재곤	전자공학	교수	손완진	영어
교수	유기연	기계공학	교수	이인욱	기계공학
교수	황영모	항공공학	교수	방성희	물리학
교수	조정만	전자공학	교수	오현의	전자공학
교수	이승기	섬유공학	교수	원태상	토목공학
교수	이상현	토목공학	교수	박경찬	응용수학
교수	전풍진	섬유공학	교수	박상조	토목공학
교수	김창제	국어	교수	박태원	공업화학
교수	박동길	광물학	교수	김문상	섬유공학
교수	임희선	금속공학	부교수	최계순	채광학
교수	한태희	화학공학	부교수	박종수	전자공학
교수	나익영	응용화학	부교수	이익춘	공업화학
교수	정봉협	응용수학	부교수	이세만	
교수	윤동석	금속공학	부교수	장석운	섬유공학
교수	염희택	금속공학	부교수	이병호	원자핵공학
교수	김영근	영어	부교수	박원희	화학공학
교수	조광하	섬유공학	부교수	이성준	전기공학
교수	류 울	영문학	부교수	정화용	체육
교수	김이조	섬유공학	부교수	서재진	기계공학
교수	이균상	건축공학	부교수	송태윤	채광학
교수	이정기	응용수학	부교수	김정훈	조선공학

조교수	민관식	섬유공학	전임강사	손병수	
조교수	엄점득	체육	전임강사	정재구	기계공학
조교수	한만춘	전기공학	전임강사	정영진	기계공학
조교수	손병찬	자원공학	전임강사	류석홍	
조교수	김상길	섬유공학	전임강사	성찬용	전기공학
조교수	최재열	금속공학	전임강사	최형섭	야금학
조교수	서동운	전자공학	전임강사	김원택	화학공학
조교수	조건찬	전기공학	전임강사	강상천	건축공학
조교수	민광식	교양과목	전임강사	박성룡	항공공학
조교수	이진우	섬유공학	전임강사	강명순	기계공학
조교수	맹선재	물리학	전임강사	염창현	건축공학
조교수	박선정	전자공학	전임강사	김영달	전기공학
조교수	마형옥		전임강사	이홍종	기계공학
조교수	박하옥	화학공학	전임강사	이용달	전기공학
조교수	남상린	전기공학	전임강사	김면식	건축공학
조교수	박종면	화학공학	전임강사	오항기	금속공학
조교수	전계상	기계공학	전임강사	김진항	기계공학
조교수	최종완	토목공학	전임강사	황재순	금속공학
조교수	우제린	섬유공학	전임강사	신태수	건축공학
조교수	박송배	통신공학	전임강사	조용달	기계공학
조교수	김동기	채광학	전임강사	이형규	화학공학
조교수	김덕황	화학공학	전임강사	이창식	
조교수	김덕진	전자공학	전임강사	황의근	건축공학
조교수	유상준	야금학	전임강사	이양우	조선공학
조교수	한병철	체육	전임강사	오재민	전기공학
조교수	심윤섭	토목공학	전임강사	김홍주	건축공학
조교수	김태열		전임강사	류수안	공업교육
조교수	김중업	건축공학	전임강사	오세관	전기공학
조교수	김종수	전기공학	전임강사	류규형	기계공학
조교수	이석구	기계공학	전임강사	김종식	건축공학
조교수	천병두	화학공학	전임강사	나윤호	화학공학
조교수	한만섭	항공공학	전임강사	정규만	금속공학
조교수	안영배	건축공학	전임강사	최학근	
조교수	김정식	공업교육	전임강사	이문종	물리학
전임강사	조광희		전임강사	이중환	
전임강사	황의준	기계공학	전임강사	신현석	
전임강사	안민구	건축공학	전임강사	이문해	기계공학



전임강사	신병식	화학공학	교수	양홍석	전기공학
전임강사	이재병	금속공학	교수	이택식	기계공학
전임강사	양동수	화학공학	교수	이재성	화학공학
전임강사	김난영	광산학	교수	최 옹	화학공학
전임강사	신현표	산업공학	교수	박민호	전기공학
전임강사	손선관	화학공학	교수	최계근	전자공학
교수	남궁식	화학공학	교수	윤장섭	건축공학
교수	변진엽	토목공학	조교수	김문규	무기재료공학
교수	홍준기	광산학	교수	정인준	토목공학
조교수	이상배	전자공학	교수	안수한	토목공학
교수	조 철	전기공학	교수	김동훈	금속공학
교수	김형길	건축공학	교수	위상규	항공공학
부교수	이 건	건축공학	교수	이영배	기계설계학
교수	우형주	전기공학	교수	심정섭	공업화학
교수	우범식	섬유공학	교수	이낙주	항공공학
교수	이 량	기계설계학	교수	김노수	섬유공학
교수	김희춘	건축공학	교수	한봉희	금속공학
교수	정성계	전기공학	교수	안철호	토목공학
교수	김봉우	건축공학	교수	김동원	기계공학
조교수	박진용	화학공학	교수	임상전	조선공학
교수	이경형	토목공학	교수	지철근	전기공학
교수	신윤경	공업화학	교수	박천경	기계공학
교수	염영하	기계설계학	교수	고명삼	계측공학
교수	김재근	조선공학	교수	조선휘	기계설계학
교수	박평주	금속공학	교수	강영진	토목공학
교수	박종은	조선공학	교수	황희용	전산학
교수	정선모	기계설계학	교수	황종흠	조선공학
교수	신영기	토목공학	교수	원종수	전기공학
교수	임응극	무기재료공학	교수	이광노	건축공학
교수	김재극	자원공학	교수	이해경	항공공학
조교수	성벽파정	화학공학	교수	윤정섭	도시계획학
교수	이종각	전기공학	교수	현병구	지구물리
교수	김준용	공업화학	교수	이재곤	섬유공학
교수	이문득	공업화학	교수	김연식	금속공학
교수	김효경	기계공학	교수	박혜일	해물리학
교수	이정환	전자공학	교수	안수길	신호처리
교수	이승원	전기공학	교수	조경국	항공우주공학

교수	하완식	섬유고분자공학	부교수	유승문	기계항공공학
교수	김문한	건축공학	교수	이기준	응용화학
교수	김극천	선박진동	교수	이화영	응용화학
교수	김상주	금속재료	교수	강춘식	재료공학
부교수	이 혁	전기공학	교수	이동녕	재료공학
교수	전용원	자원공학	교수	김종상	전기컴퓨터공학
교수	정일영	건축학	부교수	김영호	산업공학
교수	안태완	공업화학	교수	정기형	원자핵공학
교수	박순자	재료공학	교수	이기준	응용화학
교수	박영문	전기공학	교수	이현구	응용화학
교수	주종원	지구환경시스템공학	교수	정수진	재료공학
교수	박중현	지구환경시스템공학	교수	임창호	지구환경시스템공학
교수	김응서	기계공학	교수	박순달	산업공학
부교수	함주호	산업공학	교수	한송엽	전기컴퓨터공학
교수	홍성목	건축학	교수	노오현	기계항공공학
교수	고석원	재료공학	교수	송문호	기계항공공학
교수	김상용	재료공학	부교수	조영만	기계항공공학
교수	나형용	재료공학	교수	오병환	지구환경시스템공학
교수	홍성일	재료공학	교수	정창현	원자핵공학
교수	이충용	전기컴퓨터공학	교수	김효철	조선해양공학
교수	이희근	지구환경시스템공학	교수	배광준	조선해양공학
교수	선우중호	지구환경시스템공학	교수	김원찬	전기컴퓨터공학
교수	김영택	전기컴퓨터공학			

농업생명과학대학

(1977년 이전은 직급순, 이후는 퇴임일자순)

직급	성명	전공	직급	성명	전공
교수	지영린	작물학	교수	이근태	축산학
교수	안재준	식물학	교수	강진형	농학
교수	김인권	육종학	교수	김준보	농경제학
교수	이태현	원예학	교수	오순섭	수의학
교수	방선희	임산가공학	교수	이창구	토지개량학
교수	이성환	농화학	교수	홍병옥	수의학
교수	박진환	농경제학	교수	심상철	농화학
교수	조덕현	식품공학	교수	조병울	수의학
교수	심종섭	임산가공학	교수	이영상	축산학
교수	박영관	농공학	교수	신원철	농공학

교수	윤상원	축산학	전임강사	박재영	농생물학
교수	김천수	농경제학	전임강사	김준모	
교수	김호식	농화학	전임강사	최용근	임학
교수	김분옥	농가정학	전임강사	김 박	축산학
교수	김낙정	잠사학	전임강사	신영기	농공학
교수	이승규	축산학	전임강사	김시용	
교수	김상남	의학	전임강사	류충열	
교수	이철주	농공학	전임강사	임종묵	
교수	조백현		전임강사	민규식	영어
부교수	최응상	농화학	전임강사	심문택	농화학
부교수	김용필	축산학	전임강사	길원근	농화학
부교수	조재영	작물학	전임강사	김권환	축산학
부교수	장영철	작물학	전임강사	조영권	농공학
부교수	이필규	농경제학	전임강사	정현숙	농공학
부교수	황종현	농공학	전임강사	이학철	축산학
부교수	이서래	생화학	전임강사	양형승	축산학
부교수	민승복	임학	전임강사	한인근	농공학
부교수	박이조	축산학	전임강사	정인준	농공학
부교수	한상갑	철학	전임강사	홍희유	교양과목
부교수	변진엽	농공학	전임강사	김영두	교양과목
조교수	정남규	농경제학	전임강사	박명규	임학
조교수	탁운한	농생물학	전임강사	김치순	교양과목
조교수	허경복	임학	전임강사	김경득	
조교수	최덕운	임학	전임강사	김동일	교양과목
조교수	전대락	잠사학	전임강사	박영관	농공학
조교수	황정현	농화학	교수	유달영	원예학
조교수	이창희		교수	유한열	농공학
조교수	이종형	농공학	교수	변보엽	
조교수	신재상	임학	교수	현신규	임학
조교수	박성렬	임학	전임강사	마석일	잠사학
조교수	정병재	임학	교수	강수원	농생물학
조교수	김영묵	농생물학	교수	최재갑	농공학
조교수	맹문재	임학	교수	이용빈	축산학
조교수	한길수		교수	김문협	잠사학
조교수	조재무	농화학	교수	임경빈	임학
조교수	한상기	농학	교수	백운하	농생물학
조교수	맹도원	농화학	교수	이춘영	농화학

교수	박성우	농공학	교수	송해균	농산업교육학
교수	이창복	임학	교수	이계호	식품공학
교수	박광의	잠사학	교수	나용준	응용생물화학
교수	김문식	농경제학	교수	조용섭	응용생물화학
교수	표현구	원예학	교수	안건용	조경학
교수	임형빈	농생물학	교수	강석권	응용생물화학
교수	신재두	농화학	교수	고광출	식물생산과학
교수	육종룡	축산학	교수	유효석	응용생물화학
교수	최병희	천연섬유학	교수	김동암	농생명공학
교수	염도의	원예학	교수	류순호	농생명공학
교수	송계원	축산학	교수	한인규	농생명공학
교수	이양후	농가정학	교수	이필우	생물자원공학
교수	최승윤	농생물학	교수	이질현	농경제사회학
교수	이은웅	농학	교수	임경순	농생명공학
교수	현재선	농생물학	교수	이무근	농산업교육학
교수	박태식	임학	교수	안원영	생물자원공학
교수	오봉국	축산학	교수	우건석	농생명공학
교수	김재욱	농화학	교수	박영일	농생명공학
교수	김갑덕	임학	교수	이병일	식물생산과학
교수	허문희	농학	교수	남중희	생물자원공학
교수	이홍용	농경제학	교수	김호탁	농경제사회학
교수	심영근	농산물유통학	교수	우보명	산림자원학
교수	반성환	농업경영학	교수	문재유	생물자원공학
교수	고재균	재료역학	교수	Damien Mugavin	조경학
교수	정후섭	식물병리학	교수	정지웅	농경제사회학
교수	신동소	펄프제지학	교수	김현욱	농생명공학
교수	주봉규	농경제학	교수	고학균	생물자원공학
교수	최민호	농업교육	교수	김문기	생물자원공학
교수	왕인근	농경제학	교수	정하우	생물자원공학
교수	최은숙	농가정학	교수	강봉순	농경제사회학
부교수	우영덕	임산공학	교수	전재근	농생명공학
교수	정창주	농공학	교수	정희석	산림과학
교수	박창규	농화학	교수	박효근	식물생산과학
교수	김태욱	산림자원학	교수	부경생	농생명공학
교수	심재욱	식물생산과학	교수	채영암	식물생산과학
교수	이홍석	식물생산과학	교수	권용웅	식물생산과학
교수	임선욱	응용생물화학	교수	조정송	조경지역시스템공학
교수	임응규	응용생물화학			

## 미술대학

(1977년 이전은 직급순, 이후는 퇴임일자순)

직급	성명	전공	직급	성명	전공
교수	장 발	회화	교수	박세원	동양화
교수	이재훈	철학	교수	정창섭	서양화
교수	안병돈	회화	교수	김교만	시각디자인
교수	김용준	회화	교수	서세옥	동양화
교수	노수현	회화	교수	권순형	도자공예
교수	박갑성	회화	교수	김정자	회화디자인
교수	길진섭	회화	교수	김 태	서양화
교수	이순석	조각	교수	최종태	조소
부교수	김환기	회화	교수	민철홍	산업디자인
부교수	박영직		교수	최의순	조소
부교수	윤승옥	조소	교수	유근준	서양화
부교수	장우성	회화	교수	조영제	디자인
조교수	신흥휴	회화	교수	신영상	동양화
조교수	송영수	조소	교수	최만린	조소
조교수	이병현		교수	윤명로	서양화
조교수	전성우	회화	교수	이종상	동양화
전임강사	정영국		교수	정탁영	동양화
교수	김종영	조소	교수	강찬균	디자인
교수	박노수		교수	부수언	디자인
교수	문학진	서양화	교수	엄태정	조소
교수	유경채	서양화	교수	양승춘	디자인
교수	김세중	조소	교수	하동철	서양화

## 법과대학

(1977년 이전은 직급순, 이후는 퇴임일자순)

직급	성명	전공	직급	성명	전공
교수	고병국	법학	교수	진승록	법학
교수	환산덕	법학	교수	양호민	법학
교수	정광현	법학	교수	서돈각	법학
교수	이상조	법학	교수	김 진	법학
교수	전원배	법학	교수	최기철	
교수	최태영	법학	교수	이한빈	행정학
교수	김기선	법학	부교수	원희득	법학
교수	유기찬	법학	부교수	방순원	법학
교수	김도창	법학	부교수	이기한	
교수	최종길	법학	부교수	한태연	법학

부교수	엄민영	법학	교수	이한기	법학
조교수	이달호		부교수	강구진	공법학
조교수	신재황	법학	교수	정희철	사법학
조교수	김봉관	법학	교수	김기두	공법학
조교수	정인홍	법학	교수	김증한	사법학
조교수	김석조	법학	교수	김치선	공법학
조교수	박상일	법학	교수	곽윤직	사법학
조교수	윤세창	법학	교수	남궁호경	공법학
조교수	이석범		교수	배재식	국제법
조교수	정일영	법학	교수	박세일	공법학
조교수	현수길	영어	교수	황적인	민법
조교수	이형호	법학	교수	이수성	공법학
조교수	주유순	법학	교수	서원우	공법학
조교수	이영식		교수	박병호	사법학
조교수	이시윤	법학	교수	이태로	사법학
조교수	백삼출	법학	교수	김철수	법학
조교수	이승옥	법학	교수	권영성	법학
조교수	전학연	법학	교수	양승규	법학
조교수	조인행	법학	교수	심헌섭	법학
조교수	김기수	법학	교수	이호정	법학
조교수	고광임	법학	교수	최기원	법학
조교수	이인송	법학	교수	최대권	법학
조교수	박관숙	법학	교수	백충현	법학
조교수	장석만	법학	교수	김동희	법학
조교수	이진용	법학	교수	김유성	법학
조교수	김태춘	행정학	교수	최송화	법학

### 사범대학

(1977년 이전은 직급순, 이후는 퇴임일자순)

직급	성명	전공	직급	성명	전공
교수	장이옥	교육사회학	교수	조중관	수학
교수	김택원	교육학	교수	박원희	화학
교수	정순택	수학	교수	신효선	물리학
교수	신기범	영어영문학	교수	한계영	교육학
교수	이준하	교육학	교수	윤태립	심리학
교수	채관석	영어영문학	교수	이병위	체육학
교수	손정규	가정학	교수	김용환	영어영문학
교수	이재환	교육심리학	교수	김계숙	철학

교수	채희순	역사학	부교수	홍영희	체육학
교수	김기석	윤리학	부교수	김병규	
교수	임순분	체육학	부교수	김영옥	물리학
교수	최복현	지리학	부교수	김영옥	가정학
교수	조병옥	화학	부교수	이대성	지질학
교수	이종수	영어영문학	부교수	신채식	역사학
교수	김성근	서양사학	부교수	최경달	체육학
교수	피천득	영어영문학	부교수	김삼순	생물학
교수	박덕배	사회학	부교수	강이홍	영어학
교수	고광만	영어영문학	부교수	손보기	역사학
교수	정학모	국문학	부교수	주정일	가정학
교수	김장석	화학	부교수	김동성	영문학
교수	정병조	영어학	부교수	강순남	체육학
교수	임석재	심리학	조교수	정양자	가정학
교수	김석목	윤리학	조교수	이능식	역사학
교수	이하운	국어학	조교수	경흥기	체육학
교수	원용명	사회학	조교수	송기선	수학
교수	한상갑	한문학	조교수	한용국	화학
교수	서명원	교육학	조교수	박제항	물리학
부교수	최성근		조교수	정희경	교육심리학
부교수	이기인	생물학	전임강사	이영관	체육학
부교수	장형두	생물학	전임강사	한교석	영문학
부교수	이병위	체육학	전임강사	이용달	물리학
부교수	조성식	영어영문학	전임강사	이종림	수학
부교수	이탁	국어학	전임강사	강인노	
부교수	손낙범	국문학	전임강사	김희중	
부교수	정형용	국문학	전임강사	이낙복	물리학
부교수	채태성	수학	전임강사	윤병철	영어영문학
부교수	이덕봉	생물학	전임강사	최창현	독어독문학
부교수	김희규	물리학	전임강사	천병희	독어독문학
부교수	김기석	교육심리학	교수	최기철	생물학
부교수	우형규	영어영문학	교수	김형규	국어학
부교수	고정옥	국어학	교수	김병화	교육학
부교수	임정혁	가정학	교수	이성현	수학
부교수	김종건	화학	교수	정범모	교육학
부교수	조규찬	체육학	교수	인영환	체육학
부교수	오준석	화학	교수	김봉오	체육학
부교수	한효동		교수	김준민	생물학
부교수	김정원		교수	김호권	교육학

교수	윤인호	체육학	교수	김영찬	교육학
부교수	이상주	교육사회학	교수	이맹성	영문학
교수	나현성	체육학	교수	신희명	물리교육
교수	이근무	화학	교수	문 용	영문학
교수	김영식	교육행정학	교수	이동승	독문학
교수	유경노	지학	교수	김은전	국문학
교수	조규현	체육학	교수	박용현	국어교육
교수	박길준	체육학	교수	전상범	영어교육
조교수	김순택	교육과정학	교수	윤용탁	사회교육
교수	박한식	수학	교수	김연식	수학교육
교수	이지호	지리학	교수	이용필	국민윤리교육
교수	김정진	독어학	교수	이민성	지구과학교육
교수	김진원	체육학	교수	박성수	교육학
교수	진원중	교육사회학	교수	이성진	교육학
교수	강길수	교육행정학	교수	박갑수	국어교육
교수	이궁세	체육교육학	교수	노희덕	체육교육
교수	이병설	지리교육	교수	김종택	체육교육
교수	김중서	교육학	교수	황정규	교육학
교수	정연태	물리교육	교수	이상익	국어교육
교수	이응백	국어교육	교수	황재기	지리교육
교수	이용걸	교육학	교수	이범제	체육교육
교수	이영기	사회교육	교수	황적륜	영어교육
교수	정원식	교육학	교수	심명호	영어교육
교수	유정무	체육교육	교수	차경수	사회교육
교수	김종철	교육학	교수	윤세철	역사교육
교수	이태영	화학교육	교수	임승권	교육학
교수	김응태	수학교육	교수	박승재	물리교육
교수	이두현	국어교육	교수	장남기	생물교육
교수	이용직	생물교육	부교수	이승중	사회교육
교수	한기연	교육학	교수	임인재	교육학
교수	이계순	영어교육	교수	이돈희	교육학
교수	이영덕	교육학	교수	진교훈	국민윤리교육
교수	이원순	역사교육	교수	손봉호	사회교육
교수	이원식	화학교육	교수	정성태	체육교육
교수	윤팔중	교육학	교수	김광수	역사교육
교수	정연풍	불어교육	교수	채우기	화학교육
교수	박옥줄	불어교육	교수	이홍우	교육학
교수	이용주	국어학	교수	황만익	지리교육
교수	구인환	국문학	교수	권윤방	체육교육



교수	우규환	화학교육	교수	조창섭	독어교육
교수	김광해	국어교육	교수	이기석	지리교육
교수	장상호	교육학	교수	임변장	체육교육
교수	정세구	국민윤리교육	교수	곽광수	불어교육
교수	허승일	역사교육	교수	안희수	지구과학교육
교수	김신일	교육학	교수	김의수	체육교육

## 생활과학대학

(퇴임일자순)

직급	성명	전공	직급	성명	전공
부교수	정정순	가정관리학	교수	김성연	피복과학
교수	현기순	식품영양학	교수	임원자	의류학
교수	장명옥	가정관리학	교수	안승요	식품영양학
조교수	유영주	가정관리학	교수	이순원	의류학
조교수	김용희	가정관리학	교수	박양자	식품영양학
교수	모수미	응용영양학	교수	김해리	식품영양학
교수	이혜수	영양학	교수	유안진	소비자아동학

## 수의과대학

(1977년 이전은 직급순, 이후는 퇴임일자순)

직급	성명	전공	직급	성명	전공
교수	윤쾌병	수의학	교수	장두환	수의학
전임강사	김형록	수의학	교수	박응복	수의학
전임강사	안병옥	수의학	교수	이창업	수의학
전임강사	김현규	수의학	교수	마점술	수의학
전임강사	안영태	수의학	교수	권종국	수의생리학
전임강사	이정재	수의학	교수	임창형	수의병리학
전임강사	이동선	수의학	교수	조충호	수의학
전임강사	고인선	수의학	교수	최희인	수의학
부교수	정길택	수의학	교수	서익수	수의학
교수	윤석봉	수의학	교수	신광순	수의학
교수	옥종화	수의학	교수	성재기	수의학
교수	이영소	수의학	교수	이준섭	수의학
교수	오수각	수의학	교수	한홍울	수의학
교수	정창국	수의학	교수	남치주	수의학
교수	이장락	수의학	교수	황우석	수의학
교수	전윤성	수의학	조교수	강성근	수의학
교수	한수남	수의학			

**약학대학**

(1977년 이전은 직급순, 이후는 퇴임일자순)

직급	성명	전공	직급	성명	전공
교수	김성환	약학	교수	국재호	약학
교수	임기홍	약학	교수	조운성	약학
교수	이선주	약학	교수	김제훈	약학
교수	성복순	약학	교수	한대석	약학
교수	한구동	약학	교수	정보섭	약학
교수	한관섭	약학	교수	유병설	제약학
교수	이길상	화학	교수	나운용	약품제조학
교수	고현기	약학	교수	김신근	약제학
교수	홍문화	약학	교수	정원근	약화학
조교수	최병창	약학	교수	이상섭	생화학
조교수	이상섭	약학	교수	조운상	제약학
전임강사	김근규		교수	김낙두	약학
전임강사	함우영		교수	구양모	약학
전임강사	김준용		교수	김병각	제약학
전임강사	고경석		교수	이민화	약학
전임강사	조옥벽		부교수	허 훈	제약학
교수	우종학	제약학	교수	이은방	제약학
교수	박대성	약학	교수	신국현	약학
교수	백남호	약학	교수	박만기	약학
교수	채동규	약학	교수	문창규	약학
교수	심길순	약학	교수	김양배	제약학
교수	김영은	약학	교수	김박광	약학
교수	이왕규	약학	조교수	한병희	제약학

**음악대학**

(1977년 이전은 직급순, 이후는 퇴임일자순)

직급	성명	전공	직급	성명	전공
교수	현재명	작곡	부교수	안요구	기악
교수	김세형	작곡	부교수	한갑수	국어
교수	정훈모	성악	부교수	안성교	기악
교수	이혜구	국악	부교수	김학상	성악
교수	이관옥	성악	조교수	김형노	성악
교수	김원복	기악	조교수	김학근	성악
교수	이상춘	성악	조교수	이유성	기악
교수	김성태	작곡	조교수	문학준	
부교수	한인하	기악	조교수	백영준	기악

조교수	이인범	성악	교수	정진우	피아노
조교수	이강렬	기악	교수	백낙호	피아노
조교수	김달성	작곡	교수	이인영	성악
전임강사	임원식	작곡	교수	강운경	피아노
전임강사	김형근	기악	교수	이기원	피아노
전임강사	이상학		교수	이남수	작곡
전임강사	성정희	기악	교수	김용진	조성음악
전임강사	박은용	성악	교수	이명학	피아노
전임강사	나운영	작곡	교수	김혜경	성악
전임강사	이인형	기악	교수	이경숙	성악
전임강사	김복녀		교수	유태열	성악
전임강사	이명숙	성악	조교수	황성호	작곡
부교수	이재옥	기악	교수	박정호	기악
부교수	양해엽	기악	교수	김정길	작곡
부교수	신수정	기악	교수	이성균	기악
조교수	백의현	작곡	교수	강석희	작곡
교수	장사훈	국악	교수	김정규	기악
교수	김홍교	기악	교수	박노경	성악
교수	박민중	기악	교수	백병동	작곡
교수	오정주	기악	교수	이성천	국악
교수	전봉초	기악	조교수	김치환	작곡
교수	김순열	기악	교수	서계숙	기악
교수	정희갑	작곡	교수	이종숙	기악
교수	이성재	작곡	조교수	김현곤	기악
교수	한만영	국악	교수	현해은	기악
교수	안형일	성악	교수	박인수	성악
교수	이정희	성악	부교수	이강울	작곡
교수	이강숙	작곡	부교수	백혜선	기악
교수	이건용	작곡	교수	서우석	작곡
부교수	김남운	기악	교수	이재숙	국악

의과대학

(1977년 이전은 직급순, 이후는 퇴임일자순)

직급	성명	전공	직급	성명	전공
교수	심호섭	내과학	교수	김성진	외과학
교수	이선근	소아과학	교수	조호연	치과학
교수	정일천	해부학	교수	윤태권	산부인과학
교수	윤봉현	안과학	교수	전종휘	내과학
교수	최재위	비뇨기과학	교수	이동기	소아과학

교수	박진영	미생물학	교수	오진섭	약리학
교수	안호성	내과학	교수	이학송	비뇨기과학
교수	심상환	예방의학	교수	나세진	해부학
교수	진병호	외과학	교수	이진순	생화학
교수	이찬범	외과학	교수	김자훈	외과학
교수	남명석	정신과학	교수	차철환	예방의학
교수	장재현	내과학	교수	이제구	병리학
교수	이호왕	미생물학	교수	이귀향	간호학
교수	김경식	내과학	교수	이종수	
교수	김도진	내과학	교수	이부현	방사선과학
교수	오원석	피부과학	교수	윤일선	병리학
교수	윤치왕	산부인과학	교수	김두중	의사학
교수	허 규	미생물학	교수	김동의	내과학
교수	박영돈	이비과학	교수	김석환	산부인과학
교수	이돈희	내과학	부교수	이규명	미생물학
교수	이갑수	생리학	부교수	이근배	생화학
교수	김시창	외과학	부교수	한천석	안과학
교수	신성우	안과학	부교수	이병숙	이비과학
교수	조중삼	방사선과학	부교수	이장규	동위원소치료
교수	한기택	이비과학	부교수	임한중	기생충학
교수	김 철	생리학	부교수	오명수	외과학
교수	이성수	병리학	부교수	주정화	신경외과학
교수	기룡숙	미생물학	부교수	임수덕	피부과학
교수	김성환	피부과학	부교수	한동세	정신과학
교수	신한수	산부인과학	부교수	김성수	체육
교수	최의영	예방의학	부교수	한범석	예방의학
교수	이종환	생리학	부교수	최한인	의사학
교수	성낙응	생화학	부교수	서성중	약리학
교수	이상돈	생리학	부교수	남창춘	병리학
교수	이국주	소아과학	조교수	박경민	마취학
교수	이종윤	생리학	조교수	이동식	마취학
교수	명주완	정신과학	조교수	이성학	간호학
교수	이정복	내과학	조교수	박우균	
교수	정용국	치과학	조교수	김봉한	
교수	김장성	외과학	조교수	한격부	외과학
교수	이왕복	외과학	조교수	우형직	이비과학
교수	문인주	외과학	조교수	김덕호	외과학
교수	장 경	내과학	조교수	김유환	치과학
교수	장기려	외과학	조교수	김재만	해부학
교수	전성관	외과학	조교수	강수상	약리학
교수	공인호	안과학	조교수	신동열	안과학

조교수	이순형	기생충학	전임강사	한상준	화학
조교수	임문빈		전임강사	공진표	이비과학
조교수	주성순	병리학	전임강사	김창송	외과학
조교수	정언모		전임강사	최병무	외과학
조교수	박병수	외과학	전임강사	백승룡	병리학
조교수	이수종	산부인과학	전임강사	정창수	병리학
조교수	박동일	비뇨기과학	전임강사	이세규	약리학
조교수	이택수	내과학	전임강사	김희달	산부인과학
조교수	윤일병	생물학	전임강사	류 준	미생물학
조교수	이규선	병리학	전임강사	민남식	
조교수	이영길	이비인후과학	전임강사	유상봉	정형외과학
조교수	신명수	방사선과학	전임강사	신태욱	외과학
조교수	김한섭	생화학	전임강사	김진조	내과학
조교수	문석규		전임강사	서용원	외과학
조교수	이 준	피부과학	전임강사	김희섭	방사선과학
조교수	송인애	간호학	전임강사	우인덕	
조교수	최재혁	정신과학	전임강사	김중환	피부과학
조교수	이길호	산부인과학	전임강사	민덕성	내과학
조교수	이관호	외과학	전임강사	조은해	소아과학
조교수	박창호		전임강사	이완석	소아과학
조교수	유석진	정신과학	전임강사	서수규	내과학
조교수	공형식		전임강사	김세경	비뇨기과학
조교수	배병주	산부인과학	전임강사	문효중	비뇨기과학
조교수	김온자	병리학	전임강사	이기혁	비뇨기과학
조교수	문일영	이비과학	전임강사	김명호	예방의학
조교수	나봉진	해부학	전임강사	서상면	외과학
조교수	류기훈	소아과학	전임강사	고충제	안과학
조교수	김정노	외과학	전임강사	유두열	방사선과학
조교수	이필웅	안과학	전임강사	현규환	
조교수	김봉서	외과학	전임강사	장기광	간호학
전임강사	강의원		전임강사	김동창	방사선과학
전임강사	김문진		전임강사	김 준	
전임강사	김정순		전임강사	서원발	약리학
전임강사	박윤덕		전임강사	김수길	내과학
전임강사	김영조	해부학	전임강사	박호근	외과학
전임강사	한호섭	병리학	전임강사	홍기원	소아과학
전임강사	이정주	내과학	전임강사	장봉균	내과학
전임강사	신재수	외과학	전임강사	이동훈	산부인과학
전임강사	김순영	비뇨기과학	전임강사	양승목	
전임강사	진성기	신경정신과학	전임강사	조규상	예방의학
전임강사	김의준	피부과학	전임강사	김창욱	치과학

전임강사	환준식	외과학	교수	권이혁	예방의학
전임강사	최애옥	간호학	조교수	이광호	정형외과학
전임강사	이화영	마취과학	교수	한문식	정형외과학
전임강사	문명상	정형외과학	교수	장신요	해부학
전임강사	임종원	방사선과학	교수	신동훈	생리학
전임강사	이규원		교수	강석영	내과학
전임강사	채진	병리학	교수	김예흠	외과학
전임강사	염한수	안과학	교수	김홍기	이비인후과학
전임강사	손광현		조교수	변희재	간호학
전임강사	우옥자	간호학	부교수	안금환	병리학
전임강사	윤금중	신경외과학	교수	이승훈	미생물학
전임강사	임도수		교수	허인목	외과학
전임강사	박성숙	간호학	교수	서병설	기생충학
전임강사	이원노	내과학	교수	이영택	의사학
부교수	원명수		교수	이영균	흉부외과학
조교수	안승운		교수	이희영	비뇨기과학
교수	김상협	소아과학	교수	백만기	이비인후과학
교수	민병철	외과학	조교수	최성재	내과학
교수	강승호	내과학	교수	이문호	내과학
조교수	박정호	간호학	부교수	이은용	재활의학
교수	한심석	내과학	교수	홍창의	소아과학
교수	윤원식	안과학	교수	성기준	해부학
교수	이성호	내과학	교수	신면우	산부인과학
교수	이명복	해부학	교수	심보성	신경외과학
교수	오인혁	내과학	조교수	김선훈	피부과학
교수	박길수	외과학	교수	홍성국	외과학
교수	이기영	생화학	교수	김영균	비뇨기과학
교수	주동운	방사선과학	부교수	김채숙	간호학
교수	노병호	내과학	교수	고광옥	소아과학
교수	김인달	예방의학	교수	이유신	피부과학
교수	김응진	내과학	교수	이광호	해부학
조교수	조승열	기생충학	교수	이영자	간호학
교수	임정순	내과학	교수	김건열	내과학
조교수	김원석	피부과학	교수	임정규	약리학
교수	남기용	생리학	교수	김상인	임상병리학
교수	박재일	산부인과학	조교수	이선호	신경외과학
교수	김홍식	피부과학	부교수	채헌	흉부외과학
교수	홍사악	약리학	교수	한용철	내과학
교수	주근원	비뇨기과학	교수	이정균	정신과학
교수	최한웅	소아과학	교수	이상국	병리학
교수	나건영	산부인과학	교수	문형노	소아과학

교수	민헌기	내과학	교수	김시황	의학
교수	김우겸	생리학	교수	김진환	의학
교수	김수태	외과학	교수	백상호	의학
교수	김승원	생화학	교수	한만청	의학
교수	김주완	방사선의학	교수	김용일	의학
교수	장우현	미생물학	교수	김정룡	의학
교수	김진영	이비인후과학	교수	박찬용	의학
교수	김승옥	산부인과학	교수	김진호	의학
교수	윤동호	안과학	교수	최길수	의학
교수	노관택	이비인후과학	교수	최성배	의학
교수	곽일용	마취과학	교수	장가용	의학
교수	장운석	산부인과학	교수	이재홍	의학
교수	이덕용	정형외과학	교수	이영우	의학
교수	명호진	신경과학	교수	고 흥	의학
교수	이한구	정형외과학	교수	이순형	의학
교수	김종환	흉부외과학	교수	이진용	의학
교수	장운석	의학	교수	조두영	의학
부교수	신창재	의학	교수	김중술	의학
교수	서정돈	의학	교수	지제근	의학
교수	석세일	의학	교수	김영민	의학
교수	채범석	의학	교수	이현순	의학
교수	최규완	의학	교수	장봉린	의학
교수	이부영	의학	교수	이명목	의학
교수	고창순	의학	교수	이종욱	의학
교수	성호경	의학	부교수	김종재	의학
교수	윤덕노	의학	교수	함병문	의학
교수	김진복	의학	교수	최국진	의학
교수	함의근	의학	교수	김노경	의학
교수	서경필	의학	교수	이상훈	의학
교수	윤종구	의학	교수	홍강의	의학
교수	박주배	의학	교수	박용현	의학
교수	김광우	의학	교수	김용락	의학
교수	이상복	의학	교수	노준량	의학
교수	윤봉자	의학			

국제대학원

직급	성명	전공	직급	성명	전공
부교수	김장권	국제학과			

**보건대학원**

(퇴임일자순)

직급	성명	전공	직급	성명	전공
조교수	엄장현	보건학	부교수	이경식	보건학
전임강사	윤종숙	보건학	교수	박형중	보건교육학
조교수	김태용	보건학	부교수	한달선	보건관리학
부교수	고응린		교수	홍재용	보건관리학
전임강사	강길원	보건학	교수	이영환	보건학
부교수	노인규	보건학	교수	김화중	보건학

**행정대학원**

(퇴임일자순)

직급	성명	전공	직급	성명	전공
교수	이용근	행정학	교수	조석준	조직론
부교수	황인정	행정학	교수	유 훈	재무행정
교수	김운태	행정학	교수	박동서	행정이념
교수	최종기	국제행정론	교수	강신택	행정학
교수	김해동	행정조사론	교수	오석홍	행정학
교수	안해균	행정이론	교수	정정길	행정학

**환경대학원**

(퇴임일자순)

직급	성명	전공	직급	성명	전공
교수	노용희	환경학	교수	최상철	환경계획학
교수	김안제	환경계획학	교수	양윤재	환경계획학
교수	권태준	환경계획학			

**치의학대학원**

(2005년 이전은 치과대학; 1977년 이전은 직급순, 이후는 퇴임일자순)

직급	성명	전공	직급	성명	전공
교수	박명진	약리학	교수	김수철	보존학
교수	안정호	보철학	교수	이유경	교정학
교수	전일현	영어	교수	박유신	보존학
교수	심태석	보철학	교수	이영옥	보철학
교수	김용관	구강외과학	교수	김영창	구강해부학
교수	김인철	보철학	교수	김주환	예방치과학
교수	정보라	보철학	부교수	신범철	보철학
교수	김봉순	화학	부교수	조근옥	
교수	오재인	구강외과학	부교수	이재현	치주과학
교수	김동순	구강병리학	부교수	조한국	구강병리학
교수	문동선	치주과학	부교수	조희원	교정학
교수	진용환	보철학	조교수	김정규	보철학



조교수	김문조	위생학	교수	김규식	치의학
조교수	송재형	구강외과학	교수	김광남	치의학
조교수	김만수	보존학	교수	서정훈	치의학
전임강사	노광욱	보존학	교수	유동수	치의학
전임강사	선덕영	보철학	부교수	정현영	치의학
전임강사	허태운	보철학	조교수	김용호	치의학
전임강사	엄홍섭	보철학	교수	김명국	치의학
전임강사	호정진	구강외과학	교수	윤수한	치의학
전임강사	정순경	구강외과학	교수	양원식	치의학
전임강사	박기철	예방치과학	교수	이종훈	치의학
조교수	우원섭	소아치과학	조교수	한재원	치의학
부교수	정태영	구강생화학	교수	최상묵	치의학
부교수	양동규	구강외과학	교수	김철위	치의학
교수	이춘근		교수	임창윤	치의학
교수	선우양국	치과재료학	교수	이승우	치의학
교수	유종덕	구강해부학	교수	김영수	치의학
교수	장완식	치의학	교수	김종배	치의학
교수	안형규	구강방사선학	교수	박태원	치의학
교수	차문호	소아치과학	교수	이선형	치의학
교수	김영해	보존학	교수	장익태	치의학
교수	정동균	약리학	교수	권혁춘	치의학
교수	황성명	구강해부학	조교수	서상범	치의학
교수	손성희	치주과학	교수	임성삼	치의학
교수	민병일	구강외과학	교수	문혁수	치의학
교수	이명종	보존학	조교수	장경수	치의학
교수	이정식	치과보존학	교수	최선진	치의학
교수	김진태	소아치과학	교수	정성창	치의학
교수	손동수	치의학			

기타

퇴임일자순

소속	직급	성명	전공순	소속	직급	성명	전공
병설교육대학	전임강사	명운기	교육학	교양과정부	전임강사	이석형	
병설교육대학	전임강사	류덕희	음악학	생약연구소	교수	오진섭	
병설교육대학	전임강사	강대현	지리학	보건진료소	전임강사	민양기	
병설교육대학	전임강사	김양곤	체육학	천연물과학연구소	교수	우인근	약학
어학연구소	전임강사	손경환	영문학	천연물과학연구소	교수	김제훈	
대학원	교수	이인기	교육학	천연물과학연구소	교수	우원식	생화학
대학원	교수	김계숙	철학	학생생활연구소	교수	이창기	
교양과정부	전임강사	박호삼	독어학	천연물과학연구소	교수	한병훈	
학생지도연구소	조교수	원호식	심리학	천연물과학연구소	교수	지형준	
교양과정부	조교수	김용철					

## 5.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 |         |         |
|---------|---------|
| 1. 이해구  | 17. 기창덕 |
| 2. 이태영  | 18. 김원복 |
| 3. 장기려  | 19. 피천득 |
| 4. 김원룡  | 20. 이희호 |
| 5. 허문회  | 21. 허웅  |
| 6. 임석재  | 22. 안철수 |
| 7. 김재근  | 23. 변주선 |
| 8. 김태길  | 24. 이호왕 |
| 9. 조순탁  | 25. 박맹호 |
| 10. 송영욱 | 26. 손길승 |
| 11. 오창용 | 27. 이길녀 |
| 12. 장발  | 28. 홍라희 |
| 13. 한만년 | 29. 김윤범 |
| 14. 한상기 | 30. 박영주 |
| 15. 강진구 | 31. 이종욱 |
| 16. 이문호 | 32. 정석규 |

## 6. 통계

## 1) 개요

## (1) 대학기구

## 대학기구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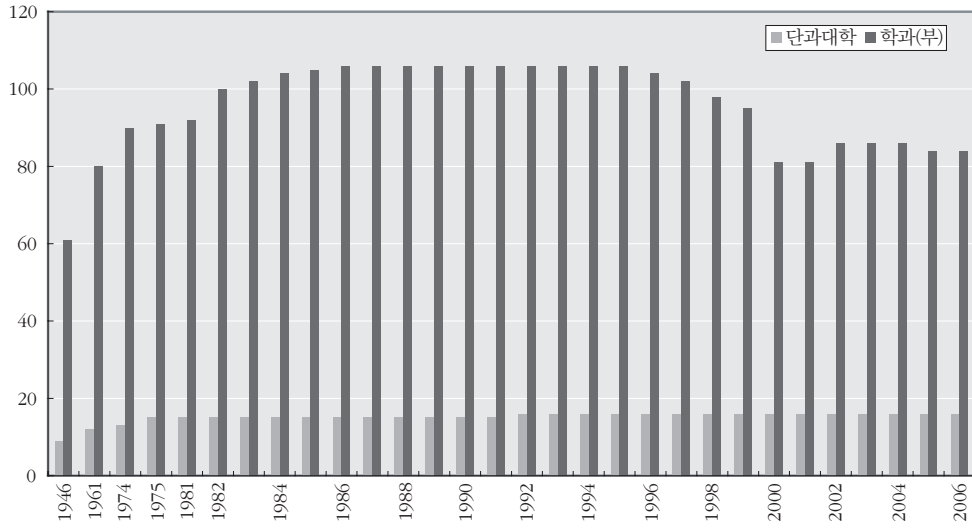
	본부	대학	대학원	부속학교	연구기관	부설기관기타	교양과정부
1963	1	11	5	3	4	4	-
1964	1	11	5	3	1	12	-
1965	1	11	5	3	15	14	-
1966	1	11	6	3	17	16	-
1967	1	11	6	3	19	17	-
1968	1	11	7	3	19	17	1
1969	1	12	7	4	20	19	1
1970	1	12	7	4	21	19	1
1971	1	12	6	4	22	11	1
1972	1	12	6	4	31	14	1
1973	1	12	7	4	30	14	1
1974	1	15	7	4	31	14	1
1975	1	15	4	4	28	21	-
1976	1	15	4	4	6	42	-
1977	1	15	4	4	7	45	-
1978	1	15	4	4	8	46	-
1979	1	15	4	4	9	43	-
1980	1	15	4	4	9	46	-
1981	1	15	4	4	10	47	-
1982	1	15	4	4	10	47	-
1983	1	15	4	4	12	47	-
1984	1	15	4	4	13	46	-
1985	1	15	4	4	15	47	-
1986	1	15	4	4	15	49	-
1987	1	15	4	4	15	51	-
1988	1	15	4	4	15	52	-
1989	1	15	4	4	17	59	-

## 대학기구 ②

	본부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원		지원 시설	연구 시설	부속 시설	부설 학교	법인 및 기타 기관
		대학 수	학과 (부)수	석사 과정 학과 (부)수	박사 과정 학과 (부)수	대학 원수	학과 수					
1990	1	15	106	92	85	3	5	-	65	22	4	7
1991	1	15	106	92	87	3	5	-	88	25	4	7
1992	1	16	106	92	88	3	5	-	95	25	4	6
1993	1	16	106	92	88	3	5	-	97	25	4	6
1994	1	16	106	92	88	3	5	-	99	26	4	6
1995	1	16	106	101	97	3	5	-	94	26	4	6
1996	1	16	104	99	95	3	5	-	95	26	4	6
1997	1	16	102	116	109	3	5	-	69	26	4	6
1998	1	16	98	108	100	3	5	-	73	26	4	6
1999	1	16	95	108	101	3	5	-	72	28	4	8
2000	1	16	81	99	89	3	5	-	72	28	4	8
2001	1	16	81	96	89	3	5	4	60	28	4	7
2002	1	16	86	96	89	3	5	2	60	28	4	7
2003	1	16	86	100	94	4	6	2	61	30	4	9
2004	1	16	86	98	97	4	6	2	97	30	4	9
2005	1	16	84	99	99	5	7	2	105	30	4	11
2006	1	16	84	98	99	5	7	2	112	31	4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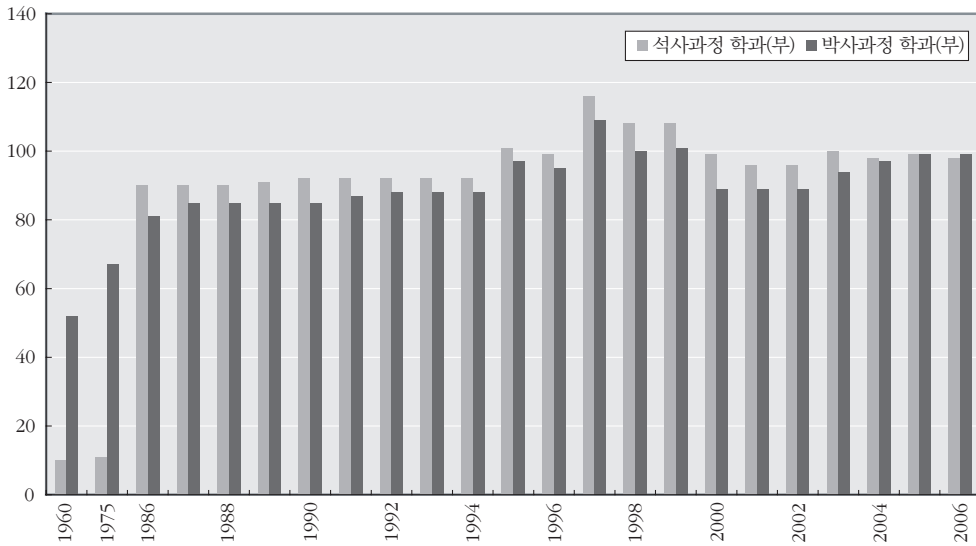
1) 2001년부터 중앙도서관, 정보화본부는 지원시설로 따로 집계

(단위 : 개)



단과대학 및 학과(부) 현황(1946, 1961, 1974, 1975, 1981~2006)

(단위 : 개)



대학원 학과(부) 현황(1960, 1975, 1986~2006)

(단위: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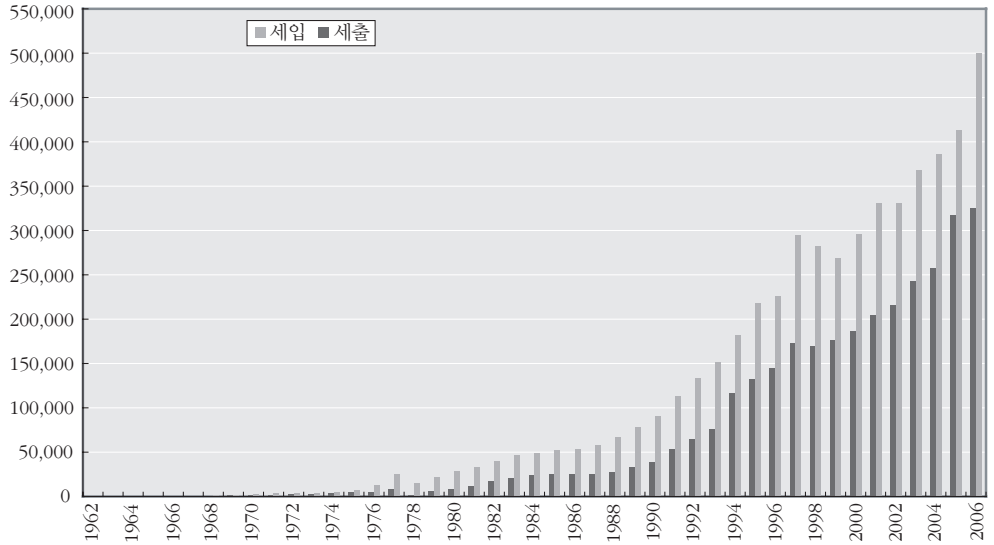
## (2) 재정 현황

연도	일반회계		기성회계		서울대발전기금		병원특별회계		계	
	세입	세출	세입	세출	세입	세출	세입	세출	세입	세출
1962	104,158	217,441	-	-	-	-	58,678	67,262	162,836	284,703
1963	118,770	285,086	-	-	-	-	84,420	88,936	203,190	374,022
1964	124,519	293,194	-	-	-	-	108,545	143,842	233,064	437,036
1965	141,231	370,451	-	-	-	-	146,882	179,769	288,113	550,220
1966	138,621	538,591	-	-	-	-	207,884	238,377	346,505	776,968
1967	160,064	622,522	-	-	-	-	320,737	342,343	480,801	964,865
1968	163,552	816,895	-	-	-	-	432,997	523,656	596,549	1,340,551
1969	188,445	1,045,236	-	-	-	-	1,036,009	996,495	1,224,454	2,041,731
1970	195,404	1,405,316	-	-	-	-	1,478,396	1,184,753	1,673,800	2,590,069
1971	229,178	1,693,836	-	-	-	-	1,871,803	1,676,176	2,100,981	3,370,012
1972	387,156	2,045,564	-	-	-	-	2,278,740	1,797,898	2,665,896	3,843,462
1973	422,471	2,274,353	-	-	-	-	2,131,697	1,908,054	2,554,168	4,182,407
1974	475,355	3,014,442	-	-	-	-	3,111,293	2,630,257	3,586,648	5,644,699
1975	885,960	4,524,851	-	-	-	-	4,149,087	3,378,221	5,035,047	7,903,072
1976	990,519	6,460,777	-	-	-	-	3,614,899	6,145,089	4,605,418	12,605,866
1977	2,035,931	12,365,940	-	-	-	-	6,873,614	13,362,625	8,909,545	25,728,565
1978	2,032,797	15,710,376	-	-	-	-	-	-	2,032,797	15,710,376
1979	2,483,931	18,378,223	4,126,319	4,039,041	-	-	-	-	6,610,250	22,417,264
1980	2,669,859	23,527,383	5,576,528	5,495,506	-	-	-	-	8,246,387	29,022,889
1981	4,712,289	25,800,218	7,486,867	7,483,979	-	-	-	-	12,199,156	33,284,197
1982	6,007,851	29,612,423	11,137,265	10,744,915	-	-	-	-	17,145,116	40,357,338
1983	6,868,603	33,313,342	14,330,838	13,709,613	-	-	-	-	21,199,441	47,022,955

연도	일반회계		기성회계		서울내발진금		병원특별회계		계	
	세입	세출	세입	세출	세입	세출	세입	세출	세입	세출
1984	7,409,771	33,122,016	16,843,848	15,682,745	-	-	-	-	24,253,619	48,804,761
1985	7,591,529	35,076,784	17,928,065	17,150,245	-	-	-	-	25,519,594	52,227,029
1986	7,643,775	36,115,552	17,645,819	17,404,264	-	-	-	-	25,289,594	53,519,816
1987	8,083,544	41,109,240	17,602,647	17,373,985	-	-	-	-	25,686,191	58,483,225
1988	8,624,550	49,307,801	19,030,796	18,356,974	-	-	-	-	27,655,346	67,664,775
1989	10,430,357	58,336,257	23,234,203	20,049,047	-	-	-	-	33,664,560	78,385,304
1990	8,805,900	64,478,915	25,191,556	25,191,556	5,341,856	1,565,783	-	-	39,339,312	91,236,254
1991	9,574,362	70,464,073	27,043,047	27,043,047	16,789,104	15,774,039	-	-	53,406,513	113,281,159
1992	9,899,500	81,074,995	39,438,870	39,438,870	15,176,213	13,181,274	-	-	64,514,583	133,695,139
1993	11,691,336	89,202,399	49,861,305	49,861,305	14,128,922	12,385,139	-	-	75,681,563	151,448,843
1994	13,368,241	104,229,827	79,591,816	59,787,488	24,072,623	17,907,345	-	-	117,032,680	181,924,660
1995	15,101,880	121,111,107	81,682,364	67,519,218	35,578,801	29,498,643	-	-	132,363,045	218,128,968
1996	15,548,636	134,390,174	63,836,480	63,836,480	65,152,974	27,491,740	-	-	144,538,090	225,718,394
1997	17,661,612	171,486,656	89,147,981	78,045,293	65,854,015	45,158,400	-	-	172,663,608	294,690,349
1998	18,221,850	165,178,085	89,549,944	80,553,726	62,402,451	36,507,176	-	-	170,174,245	282,238,987
1999	18,307,209	156,337,665	93,150,130	88,054,079	65,638,757	24,160,207	-	-	177,096,096	268,551,951
2000	17,688,491	164,866,966	101,900,103	88,903,718	67,197,019	42,211,907	-	-	186,785,613	295,982,591
2001	18,796,478	185,061,573	116,480,626	104,612,055	68,858,790	40,957,540	-	-	204,135,894	330,631,168
2002	19,731,732	193,965,930	133,109,254	112,081,029	63,155,768	25,315,237	-	-	215,996,754	331,362,196
2003	20,040,058	210,868,939	160,221,861	137,035,405	62,429,949	20,913,307	-	-	242,691,868	368,817,651
2004	19,855,490	211,102,829	173,459,357	148,030,479	63,955,103	27,093,546	-	-	257,269,950	386,226,854
2005	20,327,511	200,200,833	191,626,575	169,605,140	106,069,564	43,035,729	-	-	318,023,650	412,841,702
2006	25,637,366	200,038,674	185,130,873	185,130,873	115,107,754	115,107,754	-	-	325,875,993	500,282,301

1) 결산액 기준임 (2006년도는 예산액)

(단위 : 천 원)



재정 현황(1962~2006)

(3) 시설 현황

(단위: 坪 (1976년부터 m<sup>2</sup>) 괄호 안: 町)

연도	토지시설							건물시설
	계	교지	실험실습장	체육장	연습림	농장	기타	
1963		272,924	81,458	30,700	(15,865)	20,683	(60)	73,895
1964	(15,926)	270,032	85,043	31,200	(15,865)	20,683	-	76,221
1965	(16,924)	384,571	87,917	49,700	(16,900)	20,641	-	78,763
1966	55,289,969	415,040	91,512	49,900	54,674,605	20,683	-	79,259
1967	55,283,905	401,583	79,369	50,200	54,674,605	20,683	-	85,756
1968	55,294,864	486,001	96,538	43,200	54,669,125	5,274	-	85,913
1969	55,324,187	465,859	93,248	43,200	54,699,158	22,722	-	85,625
1970	55,786,200	1,481,790	120,929	49,000	54,111,621	22,860	-	90,263
1971	55,790,294	1,508,744	98,069	49,000	54,111,621	22,860	-	96,048
1972	55,821,986	1,535,593	98,069	45,000	54,120,464	22,860	-	97,757
1973	56,406,420	1,528,269	98,069	44,200	54,713,022	22,860	-	96,813
1974	56,346,587	1,493,058	93,114	35,400	54,702,077	22,938	-	82,275
1975	56,434,864	1,576,495	93,114	40,240	54,702,077	22,938	-	118,041



연도	토지시설							건물시설
	계	교지	실험실습장	체육장	연습림	농장	기타	
1976	185,758,558	4,757,023	425,406	133,542	180,366,892	75,695	-	432,165
1977	185,757,621	4,757,986	425,406	131,642	180,366,892	75,695	-	443,694
1978	185,673,910	4,633,991	425,406	189,786	180,366,892	57,835	-	445,929
1979	186,366,788	5,256,874	425,406	189,736	180,436,937	57,835	-	419,182
1980	185,902,376	4,869,915	425,406	112,283	180,436,937	57,835	-	388,320
1981	191,389,721	4,620,303	873,447	112,283	185,725,853	57,835	-	409,139
1982	192,077,499	1,370,569	874,978	115,967	186,031,408	58,000	3,626,577	408,573
1983	192,062,238	1,375,146	881,208	130,768	186,019,735	58,000	3,597,381	430,653
1984	192,031,146	1,357,805	894,987	130,767	186,009,006	58,000	3,580,581	438,303
1985	191,953,235	1,371,405	810,256	130,767	186,009,006	58,000	3,573,801	451,724
1986	191,862,811	1,404,268	816,950	130,767	185,970,631	58,000	3,482,195	463,286
1987	191,942,950	1,404,912	828,985	130,768	186,025,177	58,000	3,495,108	480,749
1988	191,944,792	1,400,625	835,334	130,768	186,021,341	58,000	3,498,724	482,109
1989	191,945,954	1,385,406	797,690	130,768	186,021,341	58,000	3,552,749	481,908
1990	191,934,000	1,415,000	794,000	131,000	186,025,000	58,000	3,511,000	526,796
1991	191,928,000	1,415,000	794,000	131,000	186,019,000	58,000	3,511,000	587,801
1992	191,857,000	1,410,000	794,000	131,000	186,019,000	58,000	3,445,000	606,301
1993	191,849,000	1,401,000	794,000	131,000	186,019,000	58,000	3,446,000	604,070
1994	191,874,000	1,401,000	794,000	131,000	186,019,000	58,000	3,471,000	617,432
1995	191,891,000	1,441,000	551,000	131,000	186,264,000	58,000	3,446,000	647,543
1996	192,048,000	1,403,000	547,000	131,000	186,264,000	77,000	3,626,000	727,670
1997	192,243,000	1,403,000	527,000	131,000	186,264,000	282,000	3,636,000	723,760
1998	192,298,000	1,403,000	531,000	131,000	186,262,000	282,000	3,689,000	739,002
1999	192,287,000	1,403,000	322,000	131,000	186,252,000	282,000	3,897,000	750,526
2000	192,314,000	1,403,000	322,000	131,000	186,252,000	282,000	3,924,000	805,197
2001	192,318,000	1,401,000	174,000	131,000	186,487,000	132,000	3,993,000	856,458
2002	192,318,000	1,401,000	174,000	131,000	186,487,000	132,000	3,993,000	887,444
2003	192,366,000	1,401,000	278,000	131,000	186,670,000	133,000	3,753,000	939,807
2004	192,366,000	1,401,000	278,000	131,000	186,670,000	133,000	3,753,000	998,264
2005	192,366,000	1,401,000	278,000	131,000	186,670,000	133,000	3,753,000	1,074,284
2006	192,287,000	1,401,000	199,000	131,000	186,670,000	133,000	3,753,000	1,142,129

1) 농장: 1997년 이전까지 약초원

## 2) 교직원

## (1) 단과대학별 교원

## 단과대학별 교원 ①

(단위: 명)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공과대학	80	86	92	93	115	115	123	118	124	127	135	132	135
농과대학	80	83	88	88	93	97	98	104	111	109	118	119	121
문리과대학	80	87	100	100	104	111	121	134	130	137	154	155	158
미술대학	13	13	16	16	20	19	22	22	24	25	26	27	26
법과대학	20	22	24	28	24	23	22	22	22	23	24	29	29
사범대학	52	59	63	65	69	78	79	82	81	85	88	91	90
상과대학	18	26	32	32	32	34	37	39	38	38	40	38	39
약학대학	19	19	23	22	22	25	30	28	28	29	29	30	33
음악대학	16	17	20	20	27	27	29	34	34	39	41	44	44
의과대학	94	100	108	109	108	116	126	136	138	132	142	137	140
치과대학	19	21	25	26	27	34	36	40	49	52	51	54	55
가정대학	-	-	-	-	-	-	-	-	5	8	11	11	13
교양과정부	-	-	-	-	-	-	8	41	56	73	74	77	75
대학원	1	1	2	2	2	2	2	2	1	1	1	1	-
행정대학원	7	14	13	13	13	15	16	18	18	18	17	19	15
사범대학원	-	-	-	-	-	-	-	-	1	-	-	-	-
보건대학원	2	5	3	2	4	5	8	11	15	17	19	19	18
경영대학원	-	-	-	-	-	-	1	3	3	3	3	3	3
교육대학원	-	-	-	-	-	-	2	6	4	7	9	8	9
신문대학원	-	-	-	-	-	-	-	6	7	8	8	11	11
환경대학원	-	-	-	-	-	-	-	-	-	-	-	4	6
본부	1	1	1	1	1	1	1	1	2	2	2	2	2
연구소·기타	3	3	9	10	13	18	24	31	33	29	36	40	38
계	505	557	619	627	674	720	785	878	924	962	1,028	1,051	1,061

## 단과대학별 교원 ②

(단위: 명)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인문대학	137	127	128	129	132	131	132	157	165	171	175
사회과학대학	87	76	83	89	90	94	112	117	117	119	124
자연과학대학	100	90	99	102	110	115	125	154	162	167	172
가정대학	13	11	15	15	15	15	15	17	21	21	22
경영대학	17	16	18	19	21	20	20	21	26	26	26
공과대학	127	116	123	134	150	148	156	178	187	204	204
농과대학	113	90	84	90	94	92	101	124	117	120	120
미술대학	26	25	25	25	27	28	28	34	28	37	36
법과대학	26	22	27	25	26	27	25	29	31	29	32
사범대학	92	92	87	91	90	95	105	125	126	130	131
수의과대학	-	19	22	25	26	28	28	30	30	32	31
약학대학	29	27	36	29	31	32	32	33	34	33	34
음악대학	40	38	39	39	40	40	37	43	49	49	50
의과대학	144	139	144	145	148	158	178	198	204	215	221
치과대학	54	45	52	50	53	53	56	59	58	57	60
대학원	-	-	-	2	3	3	-	-	-	-	-
행정대학원	13	13	13	13	15	15	17	19	19	20	20
보건대학원	17	18	17	16	18	17	19	21	18	22	22
환경대학원	7	7	10	9	11	10	13	16	16	17	17
본부	4	6	5	5	4	1	-	10	10	13	13
연구소·기타	26	27	39	36	39	41	37	46	44	46	49
계	1,067	1,105	1,054	1,088	1,140	1,159	1,212	1,415	1,472	1,525	1,552

## 단과대학별 교원 ③

(단위: 명)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인문대학	178	175	180	189	189	187	185	186	188	191	192
사회과학대학	124	124	122	124	127	119	120	118	123	125	124
자연과학대학	173	181	181	187	181	161	161	166	172	176	175
가정대학	22	23	22	23	24	24	23	22	25	25	25
간호대학	-	-	-	-	-	-	20	20	21	22	22
경영대학	27	26	27	29	30	30	30	29	32	33	33
공과대학	209	218	217	226	219	196	206	203	226	240	237
농업생명 과학대학	119	123	125	125	130	129	132	132	135	137	135
미술대학	38	36	39	41	41	41	41	40	42	42	42
법과대학	32	36	36	37	35	36	36	36	39	34	39
사범대학	134	134	136	135	137	138	138	136	139	138	141
수의과대학	30	33	31	34	34	34	35	34	36	35	36
약학대학	33	36	35	37	36	36	38	39	40	40	40
음악대학	48	52	52	53	53	53	53	49	52	52	51
의과대학	245	262	275	280	276	275	259	255	252	260	258
치과대학	56	63	62	66	65	64	66	67	68	72	73
행정대학원	20	18	19	22	22	22	22	20	21	21	20
보건대학원	25	25	24	24	24	20	21	21	20	21	21
환경대학원	18	17	18	19	19	19	18	19	20	21	21
본부	14	13	13	9	-	-	-	10	9	10	11
연구소·기타	49	51	49	60	65	133	132	135	135	130	131
계	1,594	1,646	1,663	1,717	1,707	1,717	1,736	1,737	1,795	1,825	1,827

## 단과대학별 교원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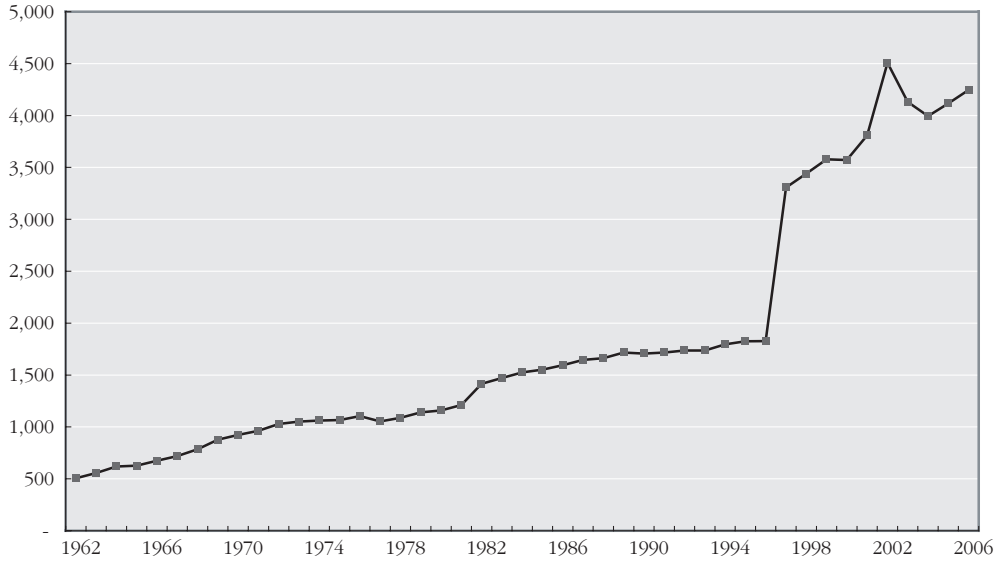
(단위: 명)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인문대학	517	541	569	573	618	669	684	621	639	659
사회과학대학	209	215	225	220	223	238	248	250	264	261
자연과학대학	298	309	314	323	334	338	344	322	334	356
간호대학	27	26	28	29	33	81	35	34	39	40
경영대학	55	57	57	58	69	71	70	69	72	73
공과대학	363	380	386	395	433	432	467	470	484	488
농업생명과학대학	197	201	199	204	215	220	216	207	213	217
미술대학	136	148	154	140	150	150	153	160	167	192
법과대학	56	60	57	60	72	71	77	77	81	83
사범대학	345	355	363	369	381	386	408	375	403	419
생활과학대	58	65	75	73	73	72	82	78	78	76
수의과대학	42	47	46	50	53	62	60	60	60	59
약학대학	54	52	54	55	53	71	76	71	73	75
음악대학	250	252	261	264	280	288	294	294	310	302
의과대학	387	408	426	417	440	724	459	449	505	539
치의학대학원	86	92	89	89	92	278	116	125	127	130
보건대학원	26	28	29	29	30	34	35	33	34	34
행정대학원	31	31	39	34	31	44	42	37	38	41
환경대학원	31	31	29	28	27	32	32	30	31	36
국제대학원	-	-	-	-	-	149	22	28	26	24
연구소·기타	138	141	178	162	139	-	131	120	70	142
BK21사업단	-	-	-	-	63	98	80	84	68	1
계	3,306	3,439	3,578	3,572	3,809	4,508	4,131	3,994	4,116	4,247

1) 치의학대학원은 2005년까지 치과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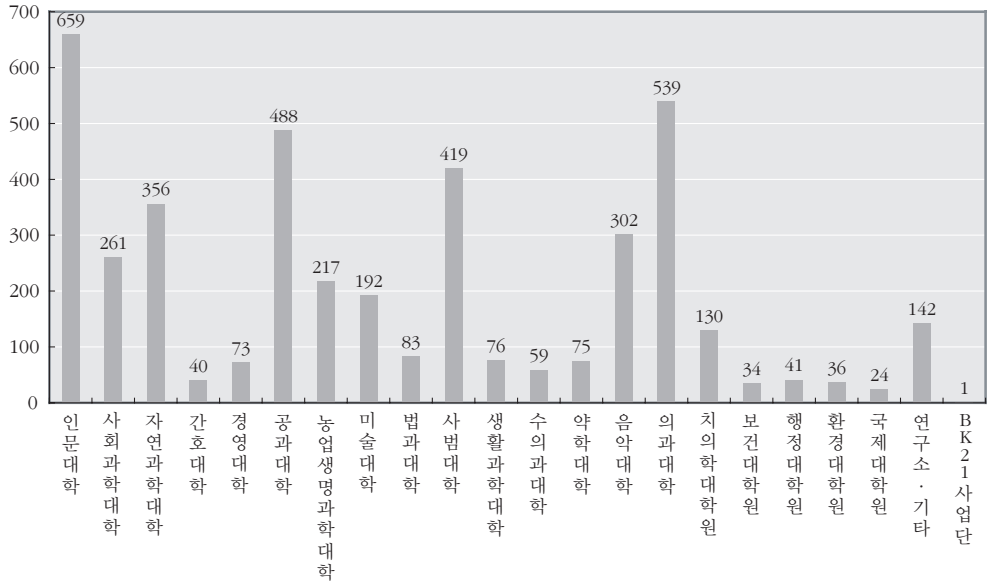
972 부록

(단위 : 명)



전체 교원 수(1962~2006)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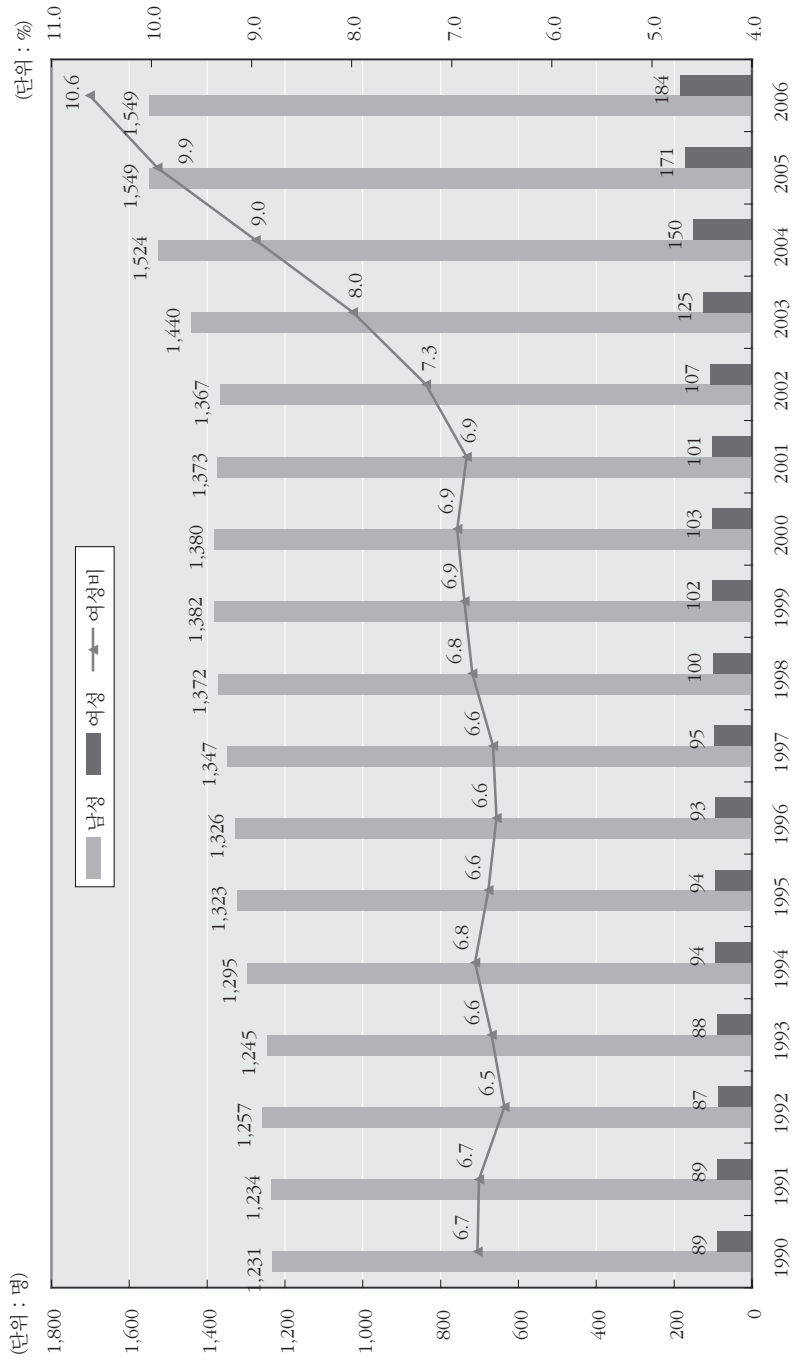
단과대학별 교원(2006년)

## (2) 전임교원 학위별·성별 인원

(단위: 명, %)

연도	학위별					성별		여성비
	박사	석사	학사	기타	계	남	여	
1966	221	203	190	60	674			
1967	243	221	198	58	720			
1968	315	239	211	40	805			
1969	267	304	256	51	878			
1970	307	348	228	41	924			
1971	341	350	225	46	962			
1972	428	342	239	19	1,028			
1973	487	334	180	50	1,051			
1974	500	333	183	45	1,061			
1975	528	319	202	24	1,073			
1976	594	295	110	6	1,005			
1977	594	325	129	6	1,054			
1978	674	264	142	8	1,088			
1979	653	292	300	50	1,295			
1980	710	237	189	23	1,159			
1981	762	251	188	17	1,218			
1982	833	298	272	12	1,415			
1983	883	323	255	11	1,472			
1984	925	356	236	8	1,525			
1985	953	355	238	6	1,552			
1986	996	427	324	20	1,767			
1987	1,066	444	304	5	1,819			
1988	1,092	439	298	7	1,836			
1989	1,119	484	271	14	1,888			
1990	1,154	142	24	-	1,320	1,231	89	6.7
1991	1,156	132	35	-	1,323	1,234	89	6.7
1992	1,208	105	31	-	1,344	1,257	87	6.5
1993	1,204	101	28	-	1,333	1,245	88	6.6
1994	1,266	99	24	-	1,389	1,295	94	6.8
1995	1,304	95	18	-	1,417	1,323	94	6.6
1996	1,309	94	16	-	1,419	1,326	93	6.6
1997	1,337	91	14	-	1,442	1,347	95	6.6
1998	1,372	87	13	-	1,472	1,372	100	6.8
1999	1,385	89	10	-	1,484	1,382	102	6.9
2000	1,397	75	11	-	1,483	1,380	103	6.9
2001	1,395	71	8	-	1,474	1,373	101	6.9
2002	1,393	74	7	-	1,474	1,367	107	7.3
2003	1,482	78	5	-	1,565	1,440	125	8.0
2004	1,594	78	2	-	1,674	1,524	150	9.0
2005	1,645	74	1	-	1,720	1,549	171	9.9
2006	1,661	72	-	-	1,733	1,549	184	10.6

1) 1990년부터 조교 제외.



교원 성별 현황(1990~2006)



## (3) 교원 강의담당 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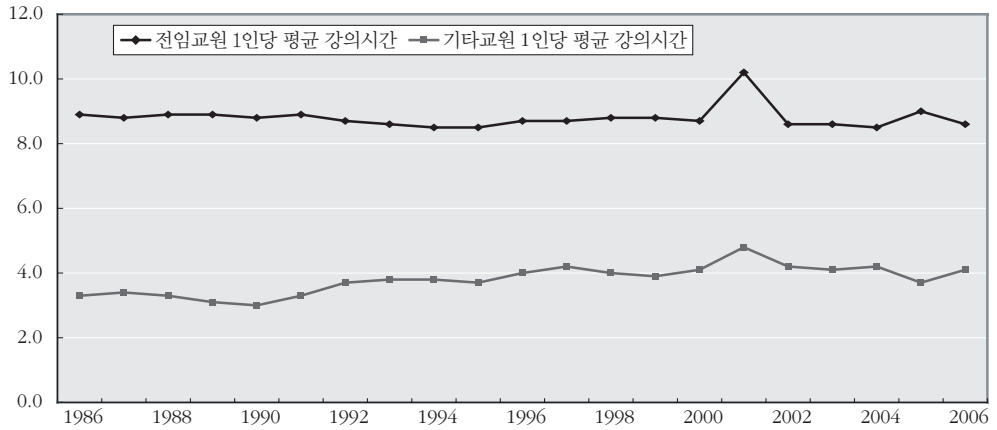
연도	전임교원				기타교원				개설 과목수
	교원수	강의담당시간총수		1인당 평균 강의시간	교원수	강의담당시간총수		1인당 평균 강의시간	
		강의	실험실습			강의	실험실습		
1986	1,226	7,225	3,745	8.9	851	2,169	670	3.3	3,127
1987	1,276	7,428	2,860	8.8	848	2,189	681	3.4	3,233
1988	1,291	7,490	2,937	8.9	941	2,432	695	3.3	3,333
1989	1,313	7,684	3,988	8.9	990	2,382	699	3.1	3,381
1990	1,320	7,305	4,269	8.8	1,024	2,417	630	3.0	3,526
1991	1,323	7,028	4,757	8.9	927	2,204	877	3.3	3,423
1992	1,344	7,297	4,347	8.7	897	2,434	851	3.7	3,385
1993	1,333	7,266	4,263	8.6	918	2,584	887	3.8	3,405
1994	1,389	7,541	4,315	8.5	899	2,618	764	3.8	3,465
1995	1,417	7,628	4,426	8.5	909	2,574	854	3.7	3,423
1996	1,419	8,285	4,111	8.7	1,120	2,925	1,621	4.0	3,203
1997	1,442	8,666	3,942	8.7	1,231	3,231	1,911	4.2	3,279
1998	1,472	9,958	2,999	8.8	1,298	3,308	1,927	4.0	3,339
1999	1,484	9,605	3,478	8.8	1,352	3,134	2,198	3.9	3,369
2000	1,483	9,579	3,309	8.7	1,378	3,454	2,199	4.1	3,487
2001	1,474	9,635	5,331	10.2	1,582	3,829	3,764	4.8	3,348
2002	1,474	9,194	3,548	8.6	1,636	4,205	2,630	4.2	3,411
2003	1,565	9,876	3,560.5	8.6	1,522	4,139	2,174	4.1	3,494
2004	1,674	10,885	3,185	8.5	1,463	3,995	2,170	4.2	3,508
2005	1,720	12,722	2,796	9.0	1,171	3,492	868	3.7	6,073
2006	1,733	12,093	2,801.6	8.6	1,588	4,369.7	2,125.4	4.1	3,560

1) 전임교원: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2) 기타교원: 명예교수, 기금교수, 시간강사

3) 실험실습시간은 2시간을 1시간으로 환산함(단, 음대, 미대, 체육교육과는 실습시간 1시간을 1시간으로 함).

(단위 :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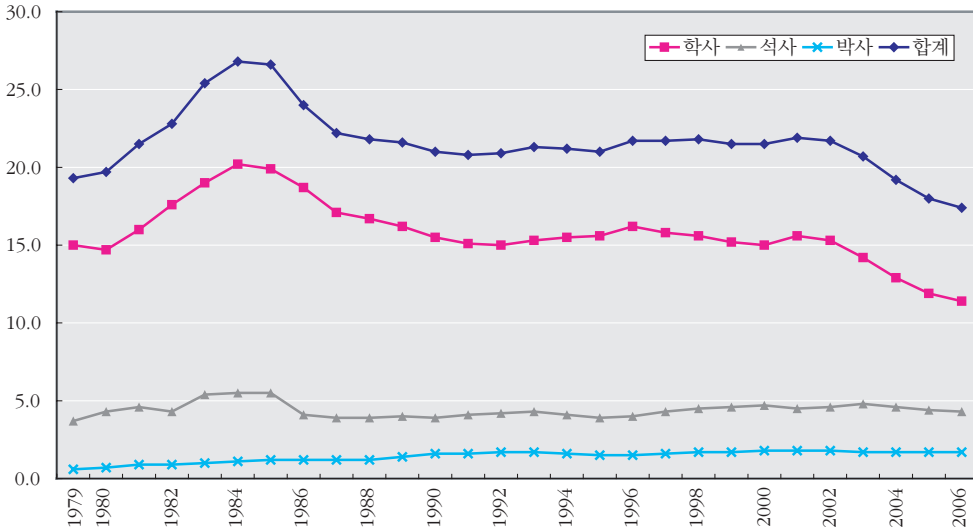
교원 강의담당 현황(1986~2006)

(4) 전임교원 1인당 학생인원 현황

(단위: 명)

연도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연도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학사	석사	박사	계		학사	석사	박사	계
1963	21.1		1.9	23.0	1985	19.9	5.5	1.2	26.6
1964	19.1		2.5	21.6	1986	18.7	4.1	1.2	24.0
1965	16.3		2.5	18.8	1987	17.1	3.9	1.2	22.2
1966	14.6		2.5	17.1	1988	16.7	3.9	1.2	21.8
1967	14.2		2.5	16.7	1989	16.2	4.0	1.4	21.6
1968	13.7		2.6	16.3	1990	15.5	3.9	1.6	21.0
1969	14.4		2.5	16.9	1991	15.1	4.1	1.6	20.8
1970	14.6		2.3	16.9	1992	15.0	4.2	1.7	20.9
1971	15.5		2.4	17.9	1993	15.3	4.3	1.7	21.3
1972	14.6		1.9	16.5	1994	15.5	4.1	1.6	21.2
1973	15.0		2.6	17.6	1995	15.6	3.9	1.5	21.0
1974	15.3		2.8	18.1	1996	16.2	4.0	1.5	21.7
1975	15.2		2.7	17.9	1997	15.8	4.3	1.6	21.7
1976	14.8		2.6	17.4	1998	15.6	4.5	1.7	21.8
1977	15.7		3.2	18.9	1999	15.2	4.6	1.7	21.5
1978	15.2		3.4	18.6	2000	15.0	4.7	1.8	21.5
1979	15.0	3.7	0.6	19.3	2001	15.6	4.5	1.8	21.9
1980	14.7	4.3	0.7	19.7	2002	15.3	4.6	1.8	21.7
1981	16.0	4.6	0.9	21.5	2003	14.2	4.8	1.7	20.7
1982	17.6	4.3	0.9	22.8	2004	12.9	4.6	1.7	19.2
1983	19.0	5.4	1.0	25.4	2005	11.9	4.4	1.7	18.0
1984	20.2	5.5	1.1	26.8	2006	11.4	4.3	1.7	17.4

(단위: 명)



전임교원 1인당 학생 현황(1979~2006)

(5) 연령별 교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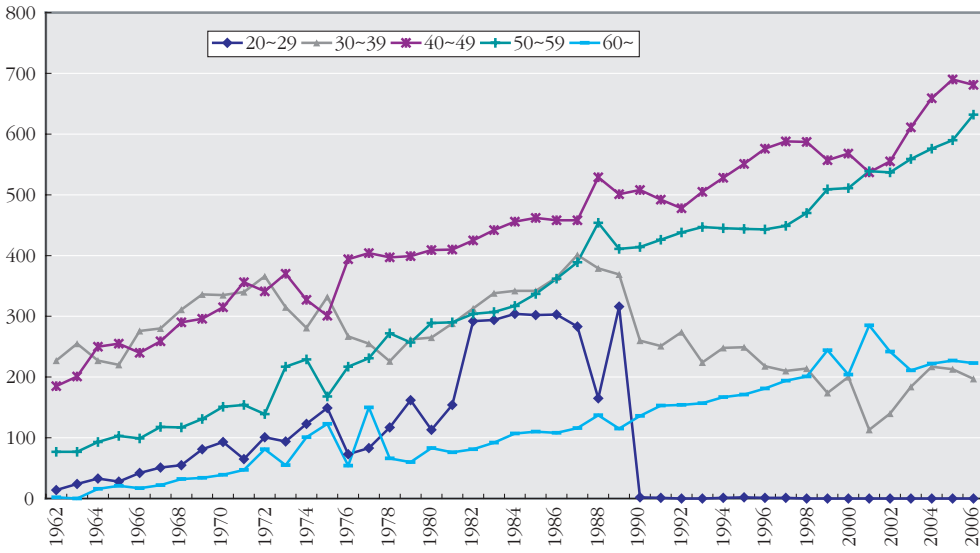
(단위: 명, %)

연도	20~29		30~39		40~49		50~59		60~		계
1962	14	2.8	227	45.0	185	36.6	77	15.2	2	0.4	505
1963	24	4.3	255	45.8	201	36.1	77	13.8	-	-	557
1964	33	5.3	227	36.7	250	40.4	93	15.0	16	2.6	619
1965	28	4.5	220	35.1	255	40.7	103	16.4	21	3.3	627
1966	42	6.2	276	40.9	240	35.6	99	14.7	17	2.5	674
1967	51	7.0	280	38.4	259	35.5	118	16.2	22	3.0	730
1968	55	6.8	311	38.6	290	36.0	117	14.5	32	4.0	805
1969	81	9.2	336	38.3	296	33.7	131	14.9	34	3.9	878
1970	93	10.0	335	35.9	315	33.8	151	16.2	39	4.2	933
1971	65	6.8	340	35.3	356	37.0	154	16.0	47	4.9	962
1972	101	9.8	366	35.6	341	33.2	139	13.5	81	7.9	1,028
1973	94	8.9	315	30.0	370	35.2	217	20.6	55	5.2	1,051
1974	123	11.6	281	26.5	327	30.8	229	21.6	101	9.5	1,061
1975	149	13.9	332	30.9	301	28.1	168	15.7	123	11.5	1,073
1976	73	7.3	267	26.6	394	39.2	217	21.6	54	5.4	1,005
1977	83	7.4	255	22.7	404	36.0	231	20.6	150	13.4	1,123
1978	117	10.9	226	21.0	397	36.8	272	25.2	66	6.1	1,0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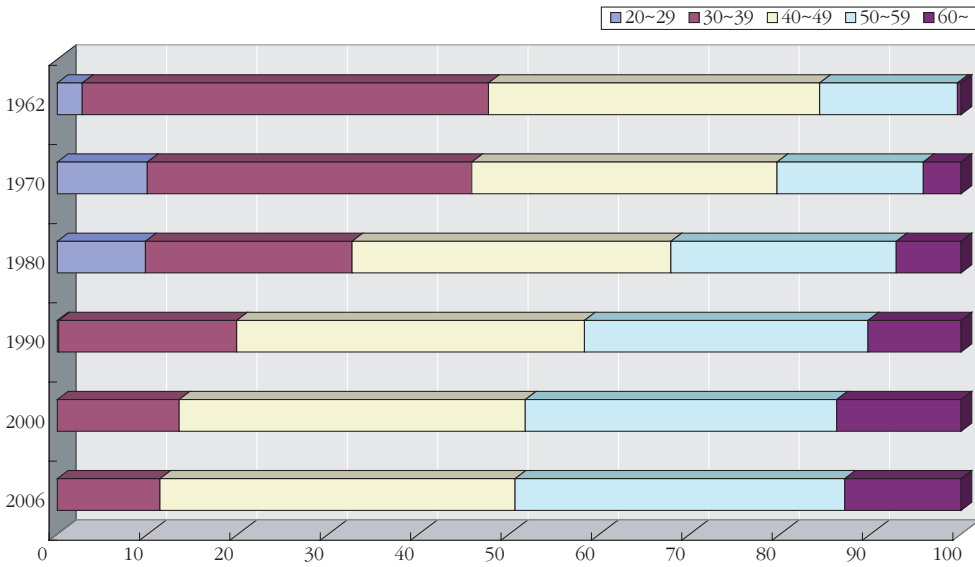
연도	20~29		30~39		40~49		50~59		60~		계
1979	162	14.2	262	23.0	399	35.0	257	22.5	60	5.3	1,140
1980	113	9.7	265	22.9	409	35.3	289	24.9	83	7.2	1,159
1981	154	12.6	288	23.6	410	33.7	290	23.8	76	6.2	1,218
1982	292	20.6	313	22.1	425	30.0	304	21.5	81	5.7	1,415
1983	294	20.0	338	22.9	442	30.0	307	20.8	92	6.2	1,473
1984	304	19.9	342	22.4	456	29.9	317	20.8	107	7.0	1,526
1985	302	19.4	342	22.0	462	29.7	337	21.7	110	7.1	1,553
1986	303	19.0	364	22.8	458	28.7	362	22.7	108	6.8	1,595
1987	283	17.2	401	24.3	458	27.8	389	23.6	116	7.0	1,647
1988	165	9.9	379	22.8	529	31.8	454	27.3	137	8.2	1,664
1989	316	18.5	369	21.6	501	29.3	411	24.0	115	6.7	1,712
1990	2	0.2	260	19.7	508	38.5	414	31.4	136	10.3	1,320
1991	1	0.1	251	19.0	492	37.2	426	32.2	153	11.6	1,323
1992	-	-	274	20.4	478	35.6	438	32.6	154	11.5	1,344
1993	-	-	224	16.8	505	37.9	447	33.5	157	11.8	1,333
1994	1	0.1	248	17.9	528	38.0	445	32.0	167	12.0	1,389
1995	2	0.1	249	17.6	551	38.9	444	31.3	171	12.1	1,417
1996	1	0.1	218	15.4	576	40.6	443	31.2	181	12.8	1,419
1997	1	0.1	210	14.6	588	40.8	449	31.1	194	13.5	1,442
1998	-	-	214	14.5	587	39.9	470	31.9	201	13.7	1,472
1999	-	-	174	11.7	557	37.5	509	34.3	244	16.4	1,484
2000	-	-	200	13.5	568	38.3	511	34.5	204	13.8	1,483
2001	-	-	113	7.7	537	36.4	539	36.6	285	19.3	1,474
2002	-	-	140	9.5	555	37.7	537	36.4	242	16.4	1,474
2003	-	-	184	11.8	611	39.0	559	35.7	211	13.5	1,565
2004	-	-	217	13.0	659	39.4	576	34.4	222	13.3	1,674
2005	-	-	213	12.4	690	40.1	590	34.3	227	13.2	1,720
2006	-	-	197	11.4	681	39.3	632	36.5	223	12.9	1,733

1) 1990년부터 조교 제외됨.

(단위 : 명)



연령별 교원 현황(1962~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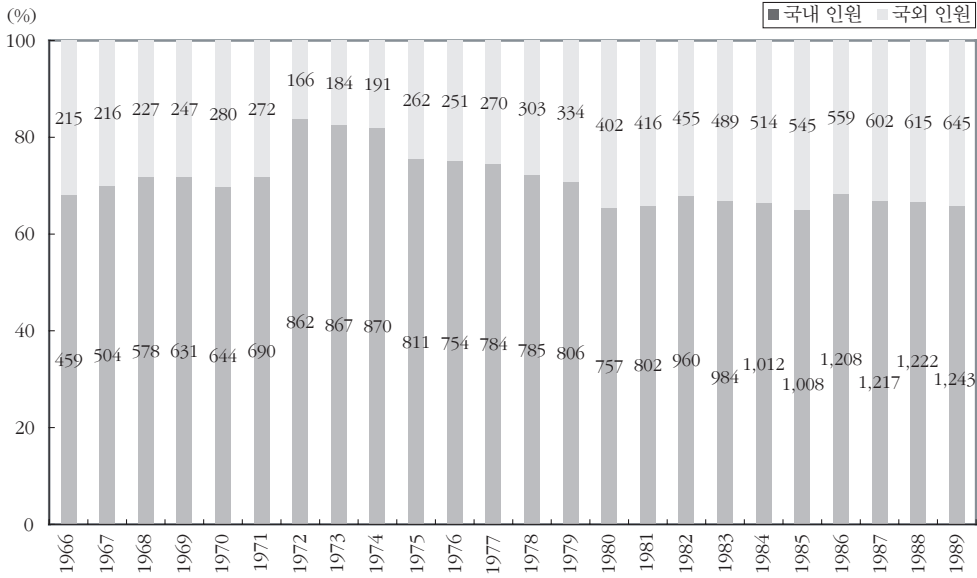
연령별 교원 구성비(1962, 1970, 1980, 1990, 2000, 2006년)

## (6) 교원 학위의 국내·국외별 구성비(조교 포함)

(단위: 명, %)

연도	국내		국외		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1966	459	68.1	215	31.9	674
1967	504	70.0	216	30.0	720
1968	578	71.8	227	28.2	805
1969	631	71.9	247	28.1	878
1970	644	69.7	280	30.3	924
1971	690	71.7	272	28.3	962
1972	862	83.9	166	16.1	1,028
1973	867	82.5	184	17.5	1,051
1974	870	82.0	191	18.0	1,061
1975	811	75.6	262	24.4	1,073
1976	754	75.0	251	25.0	1,005
1977	784	74.4	270	25.6	1,054
1978	785	72.2	303	27.8	1,088
1979	806	70.7	334	29.3	1,140
1980	757	65.3	402	34.7	1,159
1981	802	65.8	416	34.2	1,218
1982	960	67.8	455	32.2	1,415
1983	984	66.8	489	33.2	1,473
1984	1,012	66.3	514	33.7	1,526
1985	1,008	64.9	545	35.1	1,553
1986	1,208	68.4	559	31.6	1,767
1987	1,217	66.9	602	33.1	1,819
1988	1,222	66.5	615	33.5	1,837
1989	1,243	65.8	645	34.2	1,888

1) 1990년부터 국내·국외 구별 통계없음.



교원 학위의 국내 국외별 구성비(1966~1989)

(7) 교원 연구비 수탁 현황

교원 연구비 수탁현황 ①

연도	연구 교원수	건수	금액	문교부학술연구조성비		서울대 학술연구재단		기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978	571	369	899,101	163	363,007	4	9,000	202	527,094
1979	1,273	610	2,055,807	339	1,386,199	4	10,100	267	659,508
1980	1,425	637	1,911,944	296	975,000	5	15,951	336	920,993
1981	832	405	1,311,415	280	899,161	1	5,000	124	407,254
1982	614	345	1,290,012	252	868,340	1	21,336	92	400,336
1983	952	542	1,346,730	229	789,300	-	-	313	557,430
1984	954	620	1,601,294	254	858,600	1	25,000	365	717,694
1985	1,265	773	2,475,102	263	1,088,165	2	25,000	508	1,361,9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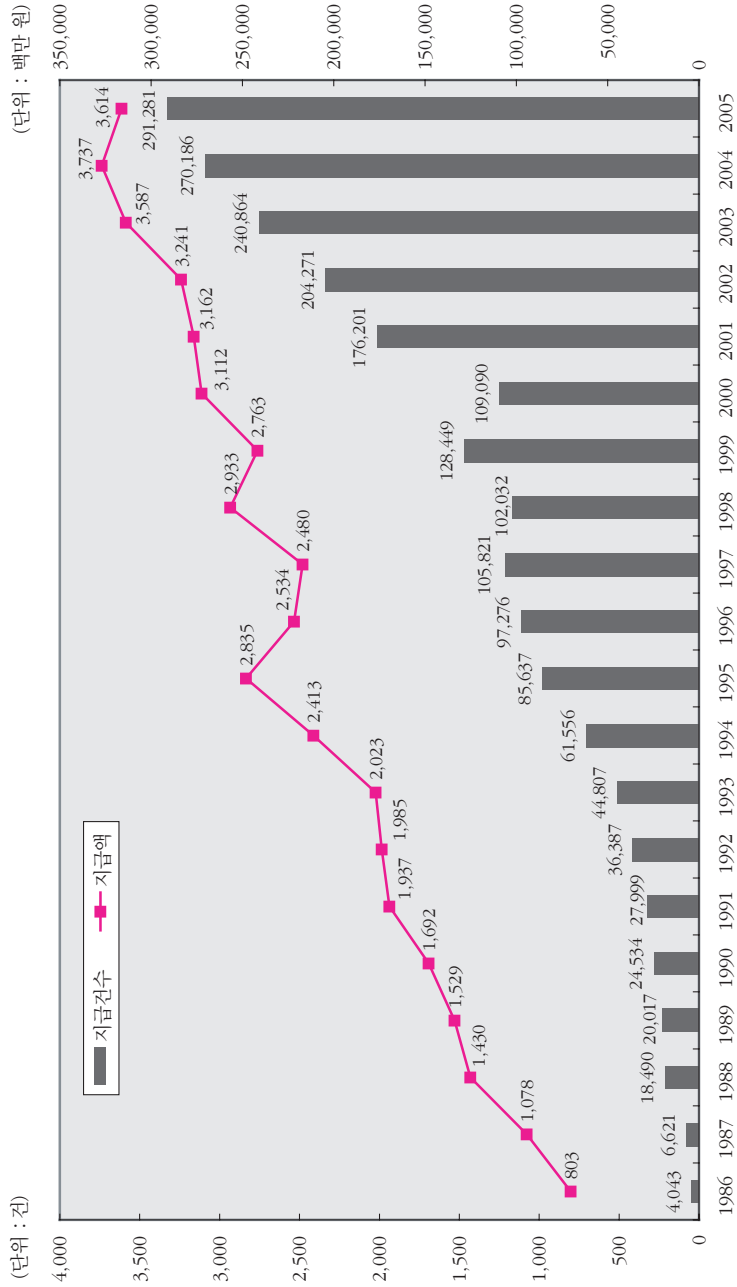
## 교원 연구비 수탁현황 ②

(단위: 천 원)

연도	학술연구비				각종 재단	계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진흥재단	한국 과학재단	정부기관	소계			
1986	진수 지급액	399 1,694,110	337 1,664,198	16 596,105	752 3,954,413	51 88,520	803 4,042,933
1987	진수 지급액	453 2,589,345	475 2,489,315	24 1,145,168	952 6,223,828	126 397,167	1,078 6,620,995
1988	진수 지급액	527 2,950,976	334 2,536,950	52 4,530,701	913 10,018,627	180 586,555	1,430 18,490,187
1989	진수 지급액	550 3,158,503	347 2,886,207	73 3,927,784	970 9,972,494	113 822,927	1,529 20,016,917
1990	진수 지급액	511 2,979,617	365 3,786,102	113 6,891,953	989 13,657,672	131 919,617	1,692 24,534,481
1991	진수 지급액	558 3,253,828	163 7,278,940	77 4,088,793	798 14,621,561	190 1,575,370	1,937 27,998,659
1992	진수 지급액	348 3,321,000	490 9,480,503	63 3,961,166	901 16,762,669	193 1,794,811	1,985 36,387,416
1993	진수 지급액	307 4,886,290	425 9,566,847	120 6,817,407	852 21,270,544	219 2,400,759	2,023 44,806,538
1994	진수 지급액	450 6,840,100	388 10,935,403	101 8,045,147	939 25,820,650	261 3,950,342	2,413 61,556,320
1995	진수 지급액	480 10,169,710	529 13,653,565	116 12,049,728	1,125 35,873,003	379 7,007,323	2,835 85,636,734



연도	학술연구비					각종 재단	용역연구비	계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진흥재단	한국 과학재단	정부기관	소계				
1996	진수 지급액	430 12,228,212	572 17,017,815	197 22,555,044	1,199 51,801,071	259 2,026,227	1,076 43,448,761	2,534 97,276,059
1997	진수 지급액	483 13,286,372	301 17,351,098	284 27,749,496	1,068 58,386,966	176 1,700,836	1,236 45,733,285	2,480 105,821,087
1998	진수 지급액	388 12,605,300	300 15,737,700	353 31,538,803	1,041 59,881,803	182 2,116,195	1,710 40,033,990	2,933 102,031,988
1999	진수 지급액	392 28,961,450	300 20,964,646	394 35,544,108	1,086 85,470,204	134 4,306,592	1,543 38,672,214	2,763 128,449,010
2000	진수 지급액	311 12,483,509	412 15,479,584	525 30,646,631	1,248 58,609,724	218 3,842,615	1,646 46,637,574	3,112 109,089,913
2001	진수 지급액	222 45,843,964	568 48,050,005	1,077 52,179,402	1,867 146,073,371	419 6,891,834	876 23,235,861	3,162 176,201,066
2002	진수 지급액	247 44,730,815	692 75,803,814	1,130 54,729,929	2,069 175,264,558	413 8,310,255	759 20,696,700	3,241 204,271,513
2003	진수 지급액	318 51,321,327	824 90,490,308	1,184 66,079,243	2,326 207,890,878	449 9,754,016	812 23,218,721	3,587 240,863,615
2004	지급액 진수	373 56,405,283	923 89,128,497	1,239 86,719,719	2,535 232,253,499	392 9,753,406	810 28,178,911	3,737 270,185,816
2005	지급액 진수	422 67,700,786	695 82,101,431	1,278 100,890,859	2,395 250,693,076	298 8,159,693	921 32,428,180	3,614 291,280,949



연구비 수탁 현황 (1986~2005)

## (8) 교원 학술연구실적 현황

## 교원 학술연구실적 현황 ①

(단위: 편, 명)

연도	저서		논문		번역		기타		합계		총계	인원수	1인당 평균
	인문	자연	인문	자연	인문	자연	인문	자연	인문	자연			
1962	65	89	134	462	13	23	97	20	309	594	903	285	3.17
1963	55	54	152	422	10	8	68	23	285	507	792	314	2.52
1964	43	30	180	491	3	-	79	-	305	521	826	272	3.04
1965	14	38	220	530	10	9	108	8	352	585	937	354	2.65
1966	25	30	208	566	9	4	98	15	340	615	955	343	2.78
1967	22	29	229	570	6	1	110	23	367	623	990	425	2.33
1968	48	59	329	767	23	29	415	48	815	903	1,718	486	3.53
1969	50	41	324	930	28	13	135	11	537	995	1,532	525	2.92
1970	43	28	335	710	31	15	248	13	657	766	1,423	558	2.55
1971	61	56	497	949	28	14	149	26	735	1,045	1,780	625	2.85
1972	78	86	402	867	36	7	152	57	668	1,017	1,685	603	2.79
1973	105	84	412	916	39	21	92	23	648	1,044	1,692	593	2.85
1974	100	74	496	908	31	20	29	92	656	1,094	1,750	673	2.60
1975	161	74	497	1,164	28	19	414	26	1,100	1,283	2,383	784	3.04
1976	124	86	352	925	39	14	533	41	1,048	1,066	2,114	722	2.93
1977	121	84	550	1,055	35	13	491	28	1,197	1,180	2,377	767	3.10
1978	82	63	512	736	40	14	350	28	984	841	1,825	885	2.06
1979	118	106	646	1,105	34	13	397	51	1,195	1,275	2,470	1,005	2.46
1980	101	69	564	1,426	24	3	297	54	986	1,552	2,538	882	2.88
1981	133	105	526	1,724	36	28	267	47	962	1,904	2,866	957	2.99
1982	206	79	657	1,839	33	8	295	116	1,191	2,042	3,233	1,035	3.12
1983	137	153	688	2,030	41	13	176	68	1,042	2,264	3,306	1,170	2.83
1984	131	131	662	1,164	48	656	153	116	994	2,067	3,061	1,150	2.66
1985	174	158	818	2,640	50	22	391	105	1,433	2,925	4,358	1,222	3.57
1986	155	100	621	2,381	53	20	347	73	1,176	2,574	3,750	1,185	3.16
1987	176	124	712	2,359	47	11	379	183	1,314	2,677	3,991	1,135	3.52
1988	173	106	799	1,929	10	36	494	1,008	1,476	3,079	4,555	1,314	3.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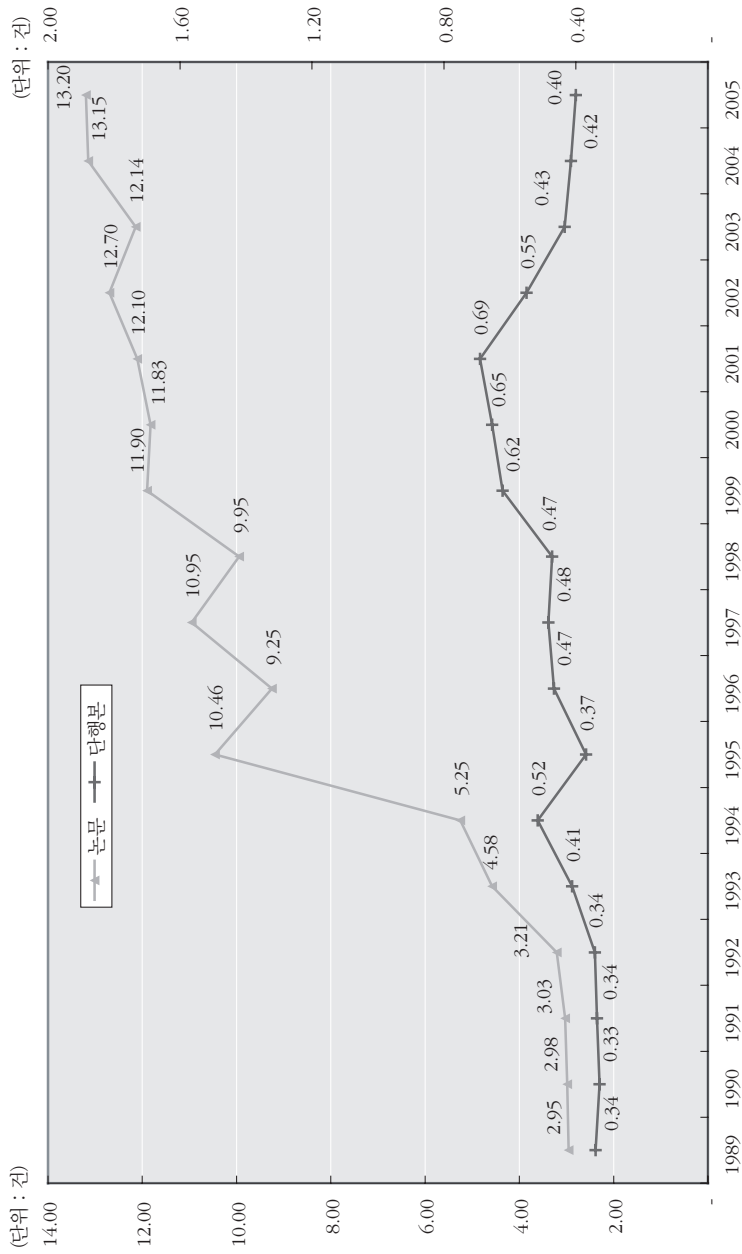
1) 기타는 공연, 발표회, 평론 등 포함.

## 교원 학술연구실적 현황 ②

연도	교수수		단행본					논문				
	현원	자료 제출자	저서	역서	편저	소계	제출자 1인당 평균	정기 학술지	학술 회의 논문	기타	소계	제출자 1인당 평균
1989	1,313	1,081	273	48	47	368	0.34	2,379	503	310	3,192	2.95
1990	1,320	1,016	260	39	35	334	0.33	2,197	503	332	3,032	2.98
1991	1,323	1,139	270	48	65	383	0.34	2,343	748	361	3,452	3.03
1992	1,344	1,189	299	49	59	407	0.34	2,567	936	311	3,814	3.21
1993	1,366	1,227	324	63	118	505	0.41	3,204	1,657	758	5,619	4.58
1994	1,408	1,204	392	78	151	621	0.52	4,168	1,477	682	6,327	5.25
1995	1,417	1,235	280	70	106	456	0.37	4,773	2,049	6,095	12,917	10.46
1996	1,509	1,291	438	75	89	602	0.47	5,009	1,879	5,055	11,943	9.25
1997	1,598	1,433	521	66	106	693	0.48	5,806	3,404	6,485	15,695	10.95
1998	1,603	1,457	536	69	83	688	0.47	5,919	3,020	5,554	14,493	9.95
1999	1,615	1,479	728	96	96	920	0.62	6,307	2,676	8,617	17,600	11.90
2000	1,627	1,511	782	93	113	988	0.65	6,825	1,953	9,090	17,868	11.83
2001	1,616	1,530	886	71	100	1,057	0.69	6,313	2,247	9,959	18,519	12.10
2002	1,656	1,513	674	56	102	832	0.55	6,642	2,755	9,814	19,211	12.70
2003	1,786	1,484	508	85	51	644	0.43	6,540	2,568	8,907	18,015	12.14
2004	1,860	1,585	499	91	68	658	0.42	7,543	2,885	10,413	20,841	13.15
2005	1,924	1,575	475	85	70	630	0.40	6,230	2,346	12,211	20,787	13.20

1) 교수현원(기금교수 포함)은 4월 1일 기준이며, 연구업적 발표기간은 매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임.

2) 논문의 기타란에는 논문집논문, 연구보고서, 지적재산권, 전시발표 및 창작, 학술회의초청강연 등을 포함.



교원 1인당 학술연구실적 현황(1989~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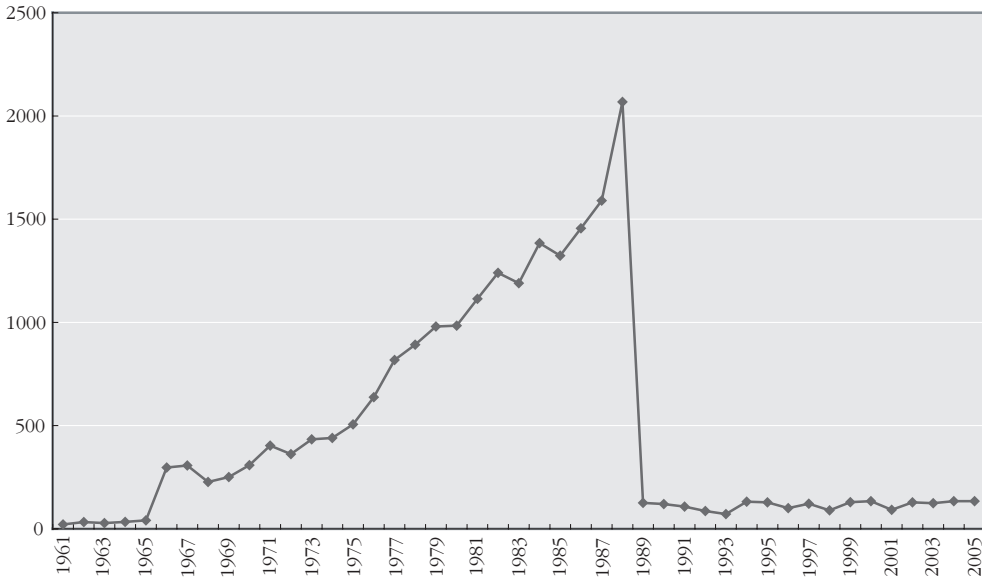
## (9) 교원 해외파견 현황

연도	지원기관별								파견지역별						계
	미네 소타	ICA	정부	국제 기구	외국 정부	외국 대학	단체	기타	미국	영국	독일	중국	일본	기타	
1961	1	4	2	-	6	-	5	3	16	1	1	-	-	3	21
1962	3	3	-	-	13	-	10	4	25	3	-	-	1	4	33
1963	-	1	-	-	7	-	7	13	22	2	3	-	-	1	28
1964	-	3	-	-	8	-	8	15	20	2	2	1	4	5	34
1965	-	-	-	-	17	14	2	7	22	1	2	5	-	12	41
1966	-	-	21	65	9	11	22	19	37	2	3	1	70	37	297
1967	-	-	18	24	45	29	31	8	45	6	8	13	52	28	307
1968	-	-	21	13	31	30	3	16	39	2	9	2	39	22	227
1969	-	-	18	43	18	30	11	5	37	2	3	4	38	42	251
1970	-	-	24	40	23	33	31	2	48	1	6	5	55	41	309
1971	-	-	31	62	41	25	44	-	43	-	5	5	76	71	403
1972	-	-	31	58	32	24	34	3	35	6	6	4	64	65	362
1973	-	-	39	89	24	26	34	5	57	3	8	2	76	71	434
1974	-	-	26	98	25	26	36	9	46	1	12	17	73	71	440
1975	-	-	22	98	31	29	53	20	58	8	5	8	84	90	506
1976	-	-	76	49	41	44	18	91	78	12	7	21	89	112	638
1977	-	-	122	76	43	53	40	75	125	10	9	17	109	139	818
1978	-	-	148	66	22	50	68	92	121	15	16	17	119	158	892
1979	-	-	141	65	26	73	82	103	139	24	15	22	144	146	980
1980	-	-	81	65	8	66	16	256	137	13	18	23	141	160	984
1981	-	-	76	64	43	92	51	231	133	34	26	20	179	165	1,114
1982	-	-	74	51	19	160	212	104	195	27	17	21	188	172	1,240
1983	-	-	71	48	29	154	202	91	154	23	16	40	212	150	1,190
1984	-	-	64	32	33	218	284	61	194	25	35	36	212	190	1,384
1985	-	-	62	53	16	203	141	231	200	24	41	30	131	191	1,323
1986	-	-	64	71	30	238	292	33	198	18	22	28	245	217	1,456
1987	-	-	85	100	31	230	279	70	251	24	28	49	224	219	1,590
1988	-	-	42	57	44	300	427	164	330	28	43	63	301	269	2,068
1989	-	-	14	3	3	37	6	-	40	5	4	-	7	7	126
1990	-	-	12	4	3	12	8	21	36	6	4	-	7	7	120
1991	-	-	14	3	-	6	6	25	42	1	4	-	2	5	108
1992	-	-	14	-	1	7	9	12	30	-	3	-	6	4	86
1993	-	-	8	-	1	10	11	6	21	1	5	-	4	5	72

연도	지원기관별								파견지역별						계
	미네 소타	ICA	정부	국제 기구	외국 정부	외국 대학	단체	기타	미국	영국	독일	중국	일본	기타	
1994	-	-	13	1	-	12	7	33	47	2	5	-	3	9	132
1995	-	-	14	-	-	7	34	9	48	5	5	-	1	5	128
1996	-	-	13	-	-	7	6	20	42	1	4	-	2	5	100
1997	-	-	11	-	-	6	6	38	45	2	3	-	7	4	122
1998	-	-	2	-	-	8	7	28	34	3	2	-	2	4	90
1999	-	-	22	-	-	10	20	12	47	5	1	1	4	7	129
2000	-	-	21	-	-	20	16	10	57	1	-	1	5	3	134
2001	-	-	20	-	-	15	5	6	39	-	1	-	3	3	92
2002	-	-	23	-	-	9	16	16	50	-	2	1	5	6	128
2003	-	-	29	-	-	7	14	12	44	-	3	2	5	8	124
2004	-	-	35	-	-	15	6	11	48	1	4	2	6	6	134
2005	-	-	2	-	-	56	1	8	47	-	2	2	6	10	134

1) 6개월 이상 장기파견자 기준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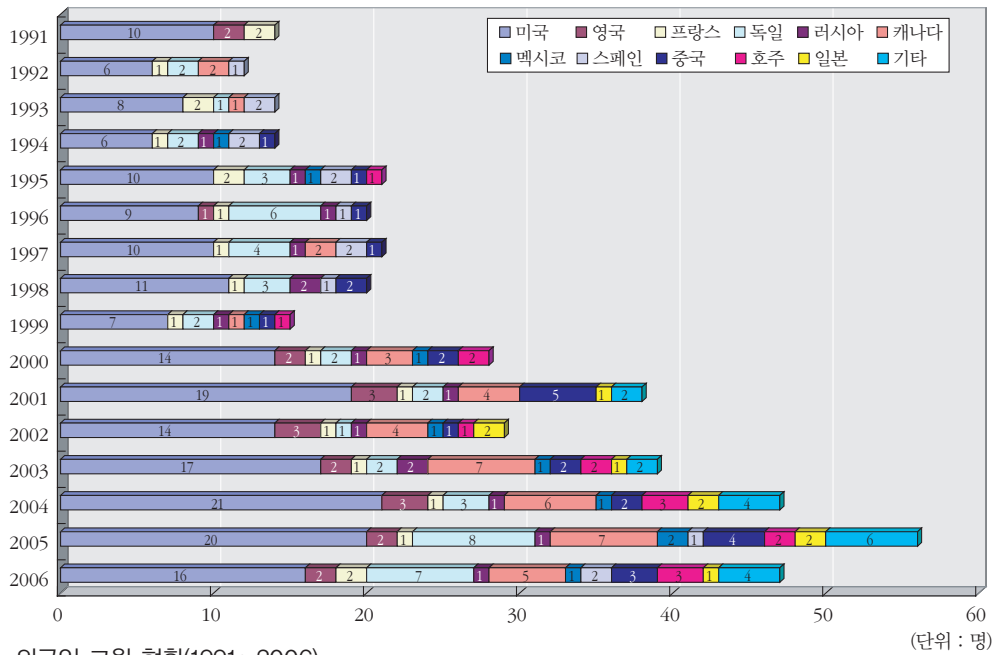


교원 해외파견 현황(1961~2005)

(10) 외국인 교원 현황

(단위: 명)

연도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캐나다	멕시코	스페인	중국	호주	일본	기타	계
1991	10	2	2	-	-	-	-	-	-	-	-	-	14
1992	6	-	1	2	-	2	-	1	-	-	-	-	12
1993	8	-	2	1	-	1	-	2	-	-	-	-	14
1994	6	-	1	2	1	-	1	2	1	-	-	-	14
1995	10	-	2	3	1	-	1	2	1	1	-	-	21
1996	9	1	1	6	1	-	-	1	1	-	-	-	20
1997	10	-	1	4	1	2	-	2	1	-	-	-	21
1998	11	-	1	3	2	-	-	1	2	-	-	-	20
1999	7	-	1	2	1	1	1	-	1	1	-	-	15
2000	14	2	1	2	1	3	1	-	2	2	-	-	28
2001	19	3	1	2	1	4	-	-	5	-	1	2	38
2002	14	3	1	1	1	4	1	-	1	1	2	-	29
2003	17	2	1	2	2	7	1	-	2	2	1	2	39
2004	21	3	1	3	1	6	1	-	2	3	2	4	47
2005	20	2	1	8	1	7	2	1	4	2	2	6	56
2006	16	2	2	7	1	5	1	2	3	3	1	4	47





## (11) 명예박사학위수여 현황(2006. 4. 1 현재)

(단위: 명)

	문학	철학	경제학	정치학	법학	경영학	이학	농학	의학	수의학	보건학	계
내국인	1	3	-	-	1	1	1	1	-	-	-	8
외국인	4	6	3	6	61		6	4	3	1	1	95

## (12) 직원 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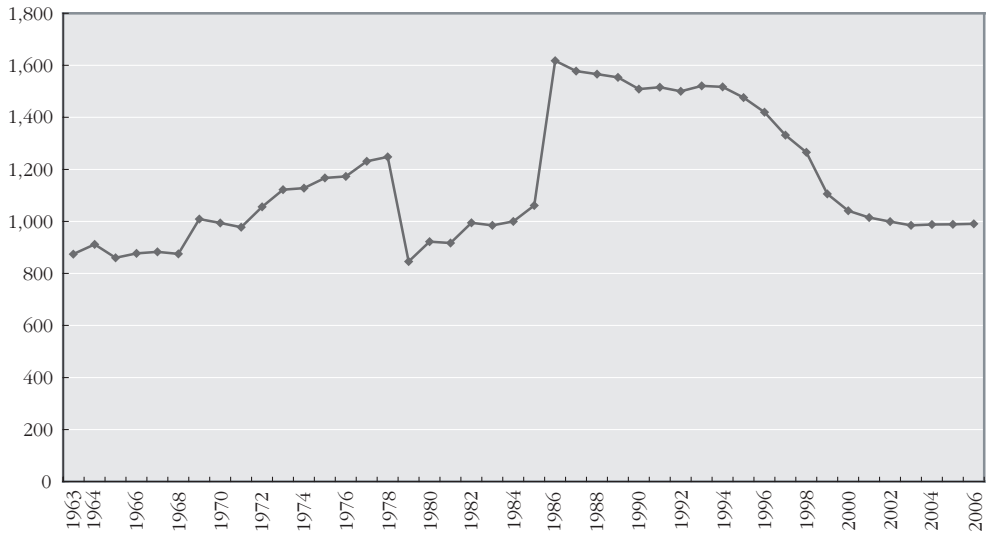
연도	일반직	학예연구직	기능직	고용직	기성회직	청원경찰	의료직	계
1963	488	-	-	387	-	-	-	875
1964	532	-	180	200	-	-	-	912
1965	495	-	184	181	-	-	-	860
1966	498	-	186	193	-	-	-	877
1967	505	-	172	206	-	-	-	883
1968	488	-	153	234	-	-	-	875
1969	560	-	134	315	-	-	-	1,009
1970	551	-	119	324	-	-	-	994
1971	548	-	-	430	-	-	-	978
1972	590	-	-	466	-	-	-	1,056
1973	652	-	-	470	-	-	-	1,122
1974	657	-	-	471	-	-	-	1,128
1975	684	-	-	483	-	-	-	1,167
1976	706	6	-	461	-	-	-	1,173
1977	730	21	-	480	-	-	-	1,231
1978	741	24	-	483	-	-	-	1,248
1979	409	31	-	406	-	-	-	846
1980	455	32	-	435	-	-	-	922
1981	456	31	-	430	-	-	-	917
1982	417	35	-	543	-	-	-	995
1983	418	34	-	533	-	-	-	985
1984	424	34	-	542	-	-	-	1,000
1985	477	37	-	547	-	-	-	1,061
1986	455	41	9	547	548	10	8	1,618
1987	461	43	9	556	486	14	9	1,578
1988	471	40	75	488	470	13	9	1,566
1989	480	43	83	535	390	14	9	1,554
1990	500	43	603	13	336	14	-	1,509
1991	521	38	621	-	319	14	-	1,516

연도	일반직	학예연구직	기능직	고용직	기성회직	청원경찰	의료직	계
1992	523	10	624	-	328	14	-	1,500
1993	531	10	633	-	333	14	-	1,521
1994	532	10	630	-	331	14	-	1,517
1995	521	10	606	-	325	14	-	1,476
1996	505	10	579	-	312	14	-	1,420
1997	478	9	533	-	298	14	-	1,332
1998	463	8	491	-	290	14	-	1,266
1999	424	6	383	-	279	14	-	1,106
2000	412	7	345	-	263	14	-	1,041
2001	405	7	334	-	255	14	-	1,015
2002	408	7	328	-	242	14	-	999
2003	407	7	321	-	236	14	-	985
2004	408	6	331	-	229	14	-	988
2005	416	6	333	-	221	13	-	989
2006	416	7	332	-	222	14	-	991

1) 일반직에 별정직 포함.

2) 의료직은 1990년부터 일반직에 포함.

(단위 : 명)



직원 현황(1963~2006)

## 3) 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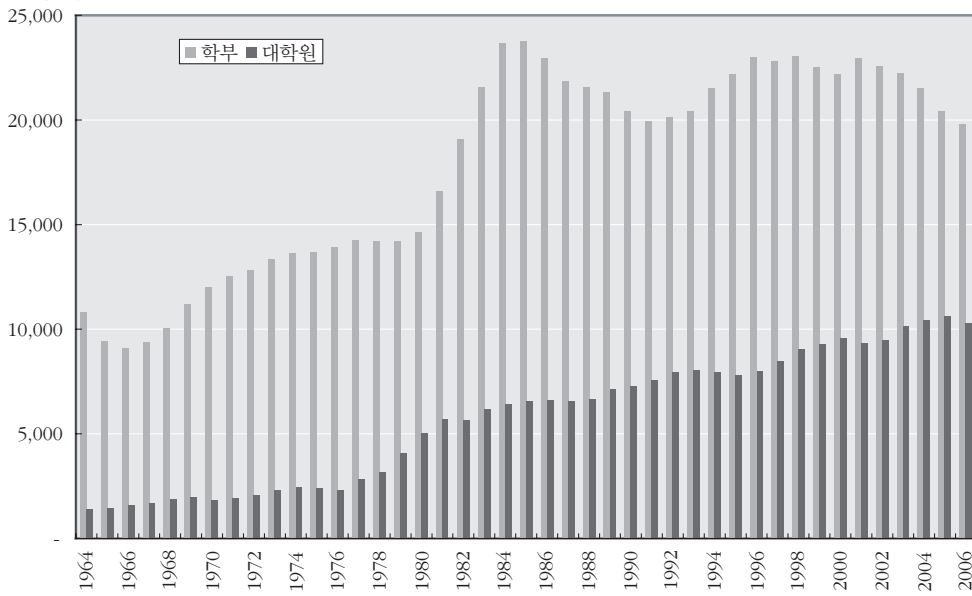
## (1) 등록생수 및 성별 현황

(단위: 명, %)

연도	대학			대학원			계		구성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남	여
1964	9,549	1,284	10,833	1,332	81	1,413	10,881	1,365	88.9	11.1
1965	8,250	1,186	9,436	1,369	79	1,448	9,619	1,265	88.4	11.6
1966	7,858	1,238	9,096	1,506	74	1,580	9,364	1,312	87.7	12.3
1967	8,077	1,291	9,368	1,573	114	1,687	9,650	1,405	87.3	12.7
1968	8,707	1,378	10,085	1,797	106	1,903	10,504	1,484	87.6	12.4
1969	9,697	1,526	11,223	1,803	166	1,969	11,500	1,692	87.2	12.8
1970	10,329	1,676	12,005	1,674	189	1,863	12,003	1,865	86.6	13.4
1971	10,787	1,777	12,564	1,717	213	1,930	12,504	1,990	86.3	13.7
1972	11,007	1,823	12,830	1,825	234	2,059	12,832	2,057	86.2	13.8
1973	11,519	1,829	13,348	2,008	289	2,297	13,527	2,118	86.5	13.5
1974	11,758	1,861	13,619	2,127	341	2,468	13,885	2,202	86.3	13.7
1975	11,873	1,835	13,708	2,135	303	2,438	14,008	2,138	86.8	13.2
1976	12,069	1,850	13,919	2,081	253	2,334	14,150	2,103	87.1	12.9
1977	12,493	1,783	14,276	2,528	338	2,866	15,021	2,121	87.6	12.4
1978	12,410	1,819	14,229	2,773	412	3,185	15,183	2,231	87.2	12.8
1979	12,373	1,838	14,211	3,523	583	4,106	15,896	2,421	86.8	13.2
1980	12,778	1,862	14,640	4,323	737	5,060	17,101	2,599	86.8	13.2
1981	14,272	2,317	16,589	4,889	810	5,699	19,161	3,127	86.0	14.0
1982	15,869	3,202	19,071	4,872	783	5,655	20,741	3,985	83.9	16.1
1983	17,350	4,247	21,597	5,329	849	6,178	22,679	5,096	81.7	18.3
1984	18,534	5,151	23,685	5,608	827	6,435	24,142	5,978	80.2	19.8
1985	18,228	5,543	23,771	5,708	877	6,585	23,936	6,420	78.9	21.1
1986	17,571	5,395	22,966	5,692	916	6,608	23,263	6,311	78.7	21.3
1987	16,789	5,074	21,863	5,565	1,032	6,597	22,354	6,106	78.5	21.5
1988	16,730	4,840	21,570	5,521	1,162	6,683	22,251	6,002	78.8	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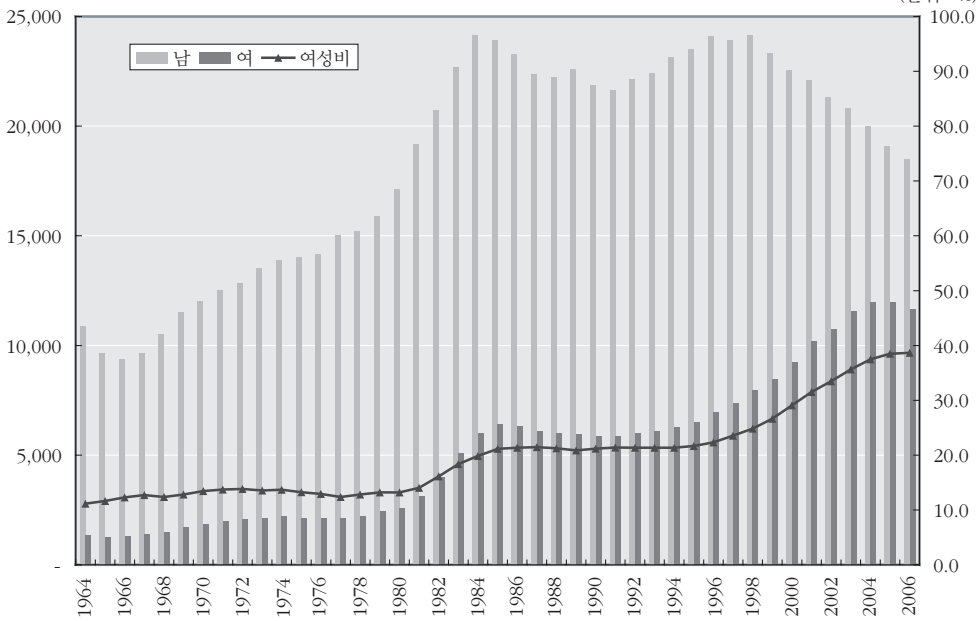
연도	대학			대학원			계		구성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남	여
1989	16,730	4,624	21,354	5,845	1,323	7,168	22,575	5,947	79.1	20.9
1990	15,977	4,456	20,433	5,890	1,417	7,307	21,867	5,873	78.8	21.2
1991	15,673	4,294	19,967	5,966	1,587	7,553	21,639	5,881	78.6	21.4
1992	15,882	4,279	20,161	6,241	1,729	7,970	22,123	6,008	78.6	21.4
1993	16,104	4,320	20,424	6,310	1,762	8,072	22,414	6,082	78.7	21.3
1994	17,052	4,468	21,520	6,115	1,822	7,937	23,167	6,290	78.6	21.4
1995	17,544	4,648	22,192	5,976	1,855	7,831	23,520	6,503	78.3	21.7
1996	18,082	4,937	23,019	6,027	1,994	8,021	24,109	6,931	77.7	22.3
1997	17,616	5,202	22,818	6,325	2,165	8,490	23,941	7,367	76.5	23.5
1998	17,504	5,535	23,039	6,638	2,438	9,076	24,142	7,973	75.2	24.8
1999	16,651	5,871	22,522	6,676	2,596	9,272	23,327	8,467	73.4	26.6
2000	15,866	6,347	22,213	6,697	2,904	9,601	22,563	9,251	70.9	29.1
2001	15,906	7,047	22,953	6,205	3,126	9,331	22,111	10,173	68.5	31.5
2002	15,273	7,308	22,581	6,054	3,423	9,477	21,327	10,731	66.5	33.5
2003	14,579	7,658	22,237	6,256	3,883	10,139	20,835	11,541	64.4	35.6
2004	13,790	7,727	21,517	6,197	4,258	10,455	19,987	11,985	62.5	37.5
2005	12,887	7,535	20,422	6,214	4,423	10,637	19,101	11,958	61.5	38.5
2006	12,525	7,287	19,812	5,950	4,361	10,311	18,475	11,648	61.3	38.7

(단위 : 명)



학부생 및 대학원생 현황(1964~2006)

(단위 : 명)



남녀학생수(1964~2006)

## (2) 단과대학 및 대학원 학생수

## 단과대학 및 대학원 학생수 ①

(단위: 명)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공과대학	1,766	1,839	1,659	1,679	1,803	2,119	2,577	2,880	3,105	3,253	3,383	2,572
농과대학	1,415	1,301	1,117	1,093	1,108	1,145	1,194	1,284	1,302	1,317	1,352	1,026
문리과대학	2,492	2,416	2,142	2,045	2,081	2,171	2,389	2,509	2,579	2,541	2,647	2,220
미술대학	374	345	279	284	274	277	286	283	280	277	283	296
법과대학	1,036	892	741	649	662	692	699	705	695	667	678	521
사범대학	1,296	1,170	925	623	965	1,121	1,279	1,396	1,476	1,560	1,667	1,358
상과대학	1,216	1,123	884	759	797	842	917	903	903	838	871	664
약학대학	398	381	326	303	319	316	324	315	316	327	323	245
음악대학	378	404	404	428	458	460	474	495	517	503	509	527
의과대학	655	626	599	587	584	622	664	720	797	850	929	990
치과대학	286	336	360	346	317	320	330	338	331	330	358	374
가정대학	-	-	-	-	-	-	90	177	263	350	348	263
교양과정부	-	-	-	-	-	-	-	-	-	-	-	2,563
소계	11,312	10,833	9,436	8,796	9,368	10,085	11,223	12,005	12,564	12,813	13,348	13,619
대학원	605	796	883	890	920	959	883	837	1,004	853	1,362	1,497
행정대학원	207	254	235	242	237	251	250	234	248	220	196	202
사범대학원	142	154	122	89	58	127	156	71	-	-	-	-
보건대학원	82	122	116	99	140	125	127	138	126	108	118	123
교육대학원	-	87	92	93	103	148	202	205	196	167	197	188
경영대학원	-	-	-	167	229	226	248	265	241	204	217	232
신문대학원	-	-	-	-	-	67	103	113	115	93	106	114
환경대학원	-	-	-	-	-	-	-	-	-	-	101	112
소계	1,036	1,413	1,448	1,580	1,687	1,903	1,969	1,863	1,930	1,645	2,196	2,468
총계	12,348	12,246	10,884	10,376	11,055	11,988	13,192	13,868	14,494	14,458	15,544	16,087

1) 1학기 등록생 기준

## 단과대학 및 대학원 학생수 ②

(단위: 명)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인문대학	1,176	1,169	1,025	1,014	758	847	1,159	1,578	1,967	2,328	2,305
사회과학대학	1,491	1,529	1,348	1,320	1,055	1,096	1,475	1,887	2,323	2,713	2,737
자연과학대학	3,031	2,720	2,758	3,227	2,914	1,538	1,832	2,268	2,564	2,728	2,658
가정대학	262	269	269	262	355	358	407	504	595	645	661
경영대학	226	225	331	346	468	457	562	755	970	1,153	1,205
공과대학	2,504	2,615	2,664	2,621	2,606	3,417	3,481	3,595	3,745	3,939	3,898
농과대학	1,304	1,293	1,464	1,072	1,078	1,597	1,880	2,118	2,366	2,481	2,445
미술대학	287	280	274	275	279	285	408	500	604	675	667
법과대학	356	344	502	528	710	772	921	1,073	1,219	1,403	1,402
사범대학	962	1,058	1,284	1,308	1,699	1,765	1,849	2,062	2,322	2,473	2,564
수의과대학	-	204	221	167	138	194	219	238	239	248	237
약학대학	237	242	248	268	340	339	329	341	365	382	389
음악대학	525	543	543	519	524	515	652	736	832	927	916
의과대학	954	936	937	905	891	984	1,002	998	1,088	1,161	1,205
치과대학	393	392	403	397	396	431	413	418	398	429	482
소계	13,708	13,819	14,271	14,229	14,211	14,640	16,589	19,071	21,597	23,685	23,771
대학원	2,016	2,030	2,453	2,763	3,487	4,345	4,921	4,911	5,386	5,582	5,702
행정대학원	191	210	194	198	297	335	348	336	370	404	409
보건대학원	126	96	106	114	191	221	226	221	221	229	243
환경대학원	105	98	113	110	131	159	204	187	201	220	231
소계	2,438	2,434	2,866	3,185	4,106	5,060	5,699	5,655	6,178	6,435	6,585
총계	16,146	16,253	17,137	17,414	18,322	19,705	22,294	24,726	27,780	30,126	30,356

1) 1학기 등록생 기준

2) 총계는 특별학생 포함

## 단과대학 및 대학원 학생수 ③

(단위: 명)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인문대학	2,155	1,982	1,913	1,926	1,837	1,716	1,666	1,661	1,731	1,785	1,808
사회과학대학	2,644	2,520	2,489	2,430	2,247	2,158	2,160	2,154	2,288	2,304	2,328
자연과학대학	2,622	2,480	2,494	2,423	2,305	2,283	2,283	2,251	2,282	2,332	2,397
가정대학	588	541	525	507	495	471	479	488	494	490	496
간호대학	-	-	-	-	-	-	298	289	301	287	299
경영대학	1,196	1,153	1,139	1,084	1,019	987	1,011	1,042	1,094	1,107	1,160
공과대학	3,719	3,549	3,449	3,401	3,271	3,245	3,481	3,931	4,529	5,034	5,522
농업생명과학대학	2,328	2,275	2,387	2,532	2,386	2,320	2,312	2,283	2,379	2,399	2,455
미술대학	644	625	617	594	578	555	560	552	573	560	591
법과대학	1,396	1,304	1,294	1,295	1,301	1,322	1,321	1,335	1,347	1,376	1,390
사범대학	2,439	2,243	2,129	2,042	1,956	1,929	1,912	1,857	1,893	1,908	1,962
수의과대학	245	232	246	280	263	242	254	238	261	268	269
약학대학	379	373	362	360	346	335	344	337	343	346	335
음악대학	892	843	801	785	771	770	778	736	748	739	749
의과대학	1,233	1,212	1,232	1,224	1,217	1,203	873	855	839	841	823
치과대학	513	531	493	471	441	431	429	415	418	416	435
소계	22,993	21,863	21,570	21,354	20,433	19,967	20,161	20,424	21,520	22,192	23,019
대학원	5,743	5,773	5,885	6,334	6,486	6,691	7,068	7,204	7,117	7,037	7,199
행정대학원	391	374	360	366	368	383	411	375	349	325	346
보건대학원	247	242	233	258	245	259	259	259	253	249	263
환경대학원	227	208	205	210	208	220	232	234	218	220	213
소계	6,608	6,597	6,683	7,168	7,307	7,553	7,970	8,072	7,937	7,831	8,021
총계	29,601	28,460	28,253	28,522	27,740	27,520	28,131	28,496	29,457	30,023	31,040

1) 1학기 등록생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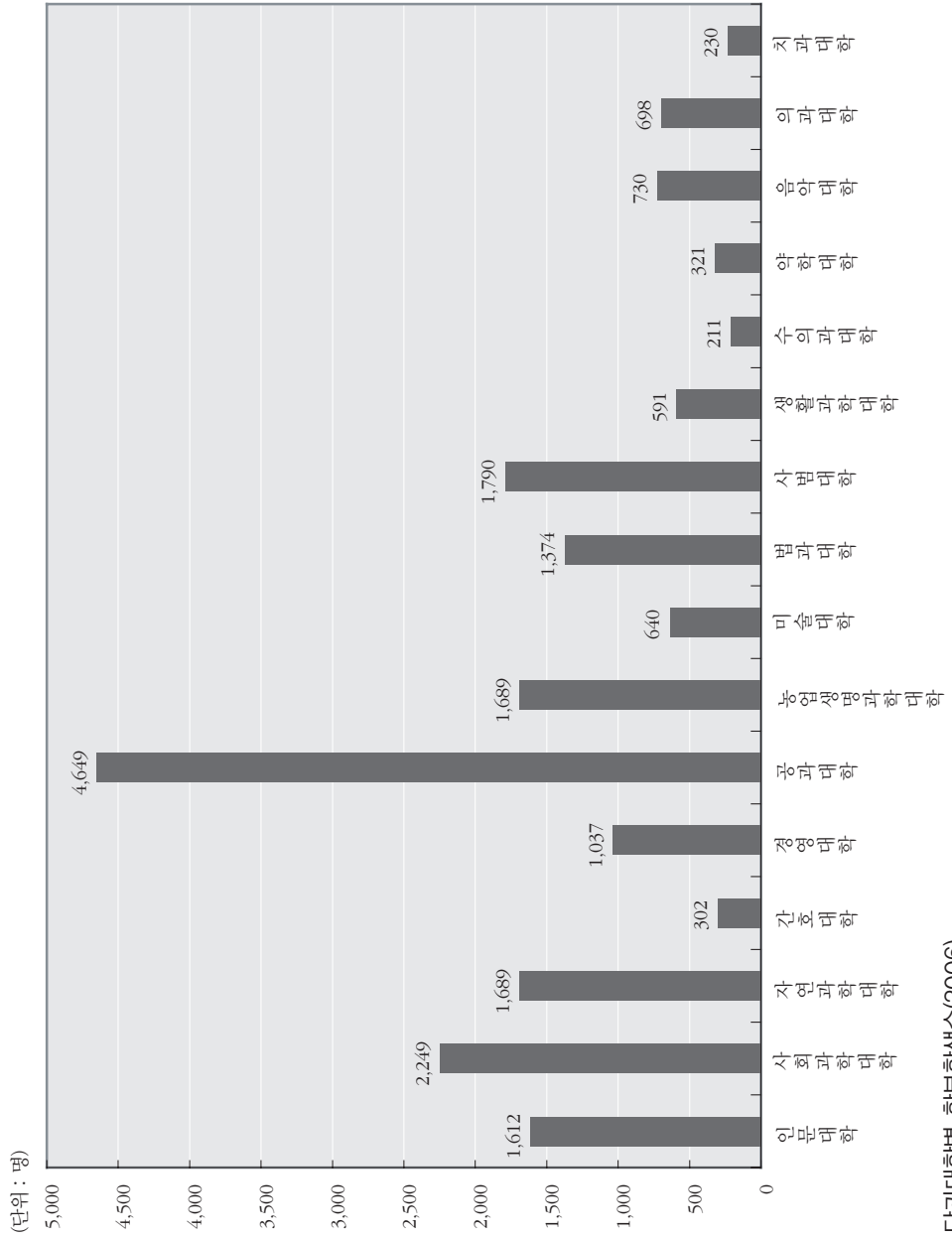


## 단과대학 및 대학원 학생수 ④

(단위: 명)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인문대학	1,799	1,807	1,785	1,726	1,823	1,866	1,824	1,825	1,726	1,612
사회과학대학	2,294	2,378	2,370	2,383	2,467	2,475	2,477	2,489	2,342	2,249
자연과학대학	2,383	2,445	2,453	2,335	2,362	2,191	1,987	1,803	1,672	1,689
간호대학	275	285	265	255	273	270	275	285	288	302
경영대학	1,130	1,152	1,124	1,159	1,222	1,229	1,250	1,209	1,108	1,037
공과대학	5,778	5,889	5,735	5,667	5,732	5,601	5,350	4,915	4,603	4,649
농업생명과학대학	2,094	1,965	1,777	1,749	1,878	1,769	1,798	1,820	1,743	1,689
미술대학	567	581	582	592	611	612	641	662	638	640
법과대학	1,387	1,407	1,440	1,435	1,485	1,465	1,464	1,416	1,400	1,374
사범대학	1,904	1,952	1,931	1,895	2,038	2,016	2,009	1,961	1,909	1,790
생활과학대학	600	608	578	562	603	588	593	594	584	591
수의과대학	259	220	182	154	130	127	182	184	209	211
약학대학	344	343	323	334	340	335	334	319	334	321
음악대학	753	773	754	744	766	787	788	779	755	730
의과대학	825	817	806	819	804	822	821	802	769	698
치과대학	416	417	417	404	419	428	444	454	342	230
소계	22,808	23,039	22,522	22,213	22,953	22,581	22,237	21,517	20,422	19,812
대학원	7,599	8,061	8,326	8,430	8,182	8,315	9,105	9,231	9,255	8,864
보건대학원	262	284	309	305	288	292	300	337	332	306
행정대학원	353	381	397	370	365	375	424	430	436	445
환경대학원	213	231	240	257	262	251	238	257	286	281
국제대학원	47	119	160	239	234	244	72	200	240	241
치의학대학원	-	-	-	-	-	-	-	-	88	174
소계	8,474	9,076	9,432	9,601	9,331	9,477	10,139	10,455	10,637	10,311
총계	31,282	32,115	31,954	31,814	32,284	32,058	32,376	31,972	31,059	30,123

1) 국제대학원에 2000년, 2001년 천연물과학연구소 포함.



## (3) 졸업생 취업, 진학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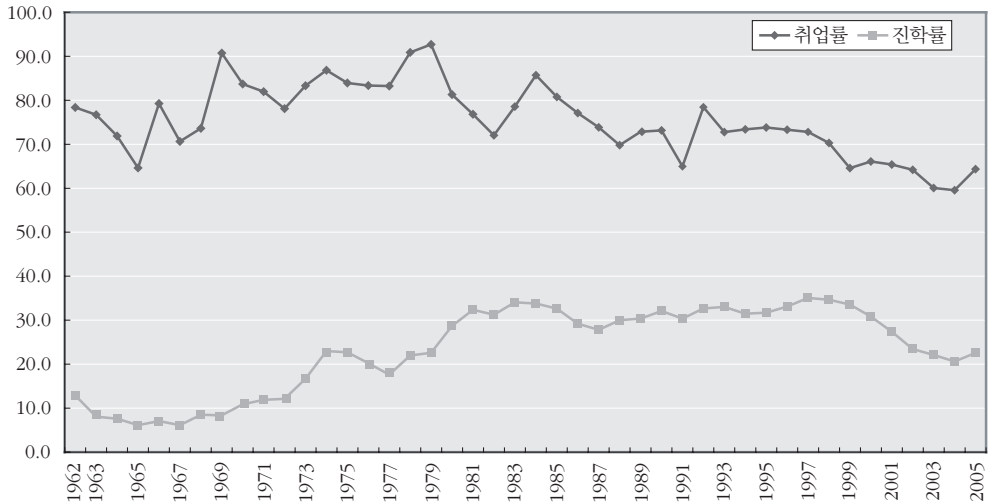
(단위: 명, %)

연도	취업	진학	군입대	미취업 기타	계	취업률	진학률
1962	1,054	273	495	291	2,113	78.4	12.9
1963	1,162	200	768	353	2,483	76.7	8.1
1964	1,400	241	972	548	3,161	71.9	7.6
1965	1,566	208	755	858	3,387	64.6	6.1
1966	1,165	167	724	305	2,361	79.3	7.1
1967	998	133	616	415	2,162	70.6	6.2
1968	1,012	186	625	363	2,186	73.6	8.5
1969	1,421	190	507	145	2,263	90.7	8.4
1970	1,223	269	737	238	2,467	83.7	10.9
1971	1,339	306	635	295	2,575	81.9	11.9
1972	1,385	349	757	388	2,879	78.1	12.1
1973	1,343	484	803	269	2,899	83.3	16.7
1974	1,409	695	707	214	3,025	86.8	23.0
1975	1,681	774	630	322	3,407	83.9	22.7
1976	1,595	678	757	319	3,349	83.3	20.2
1977	1,773	623	782	357	3,535	83.2	17.6
1978	1,943	806	724	195	3,668	90.9	22.0
1979	2,033	818	612	160	3,623	92.7	22.6
1980	1,823	1,137	583	419	3,962	81.3	28.7
1981	1,947	1,517	634	587	4,685	76.8	32.4
1982	1,846	1,459	649	717	4,671	72.0	31.2
1983	2,122	1,699	587	579	4,987	78.6	34.1
1984	2,384	1,735	617	397	5,133	85.7	33.8
1985	2,894	2,139	834	689	6,556	80.8	32.6
1986	3,267	2,069	783	970	7,089	77.1	29.2
1987	3,256	2,036	877	1,154	7,323	73.8	27.8
1988	2,992	2,088	585	1,294	6,959	69.8	30.0
1989	2,819	2,016	759	1,050	6,644	72.9	30.3
1990	2,756	2,061	592	1,011	6,420	73.2	32.1
1991	2,800	2,123	561	1,510	6,994	65.0	30.4
1992	3,203	2,221	491	881	6,796	78.4	32.7
1993	3,059	2,277	411	1,144	6,891	72.8	33.0
1994	3,218	2,210	423	1,167	7,018	73.4	31.5
1995	3,278	2,223	351	1,162	7,014	73.8	31.7
1996	3,316	2,391	311	1,208	7,226	73.3	33.1

연도	취업	진학	군입대	미취업 기타	계	취업률	진학률
1997	3,192	2,559	358	1,191	7,300	72.8	35.1
1998	3,137	2,543	333	1,325	7,338	70.3	34.7
1999	3,003	2,535	370	1,647	7,555	64.6	33.6
2000	3,456	2,427	220	1,773	7,876	66.1	30.8
2001	3,229	1,977	306	1,708	7,220	65.4	27.4
2002	3,311	1,676	310	1,846	7,143	64.2	23.5
2003	3,098	1,547	295	2,060	7,000	60.1	22.1
2004	3,325	1,561	422	2,259	7,567	59.5	20.6
2005	3,579	1,674	184	1,983	7,420	64.3	22.6

- 1) 대학, 대학원 총합
- 2) 조사대상 변경
  - ① 1999년 이전: 해당년도 2월 졸업생
  - ② 2000년 이후: 전년도 8월 졸업생 + 해당년도 2월 졸업생
- 3) 입학 전 취업자는 미취업란에 포함
- 4) 취업률 산출기준: 취업자 수 / [졸업생 수 - (진학 + 군입대)] × 100

(단위 : %)



졸업생 취업 및 진학률(1962~2005)

## (4) 등록금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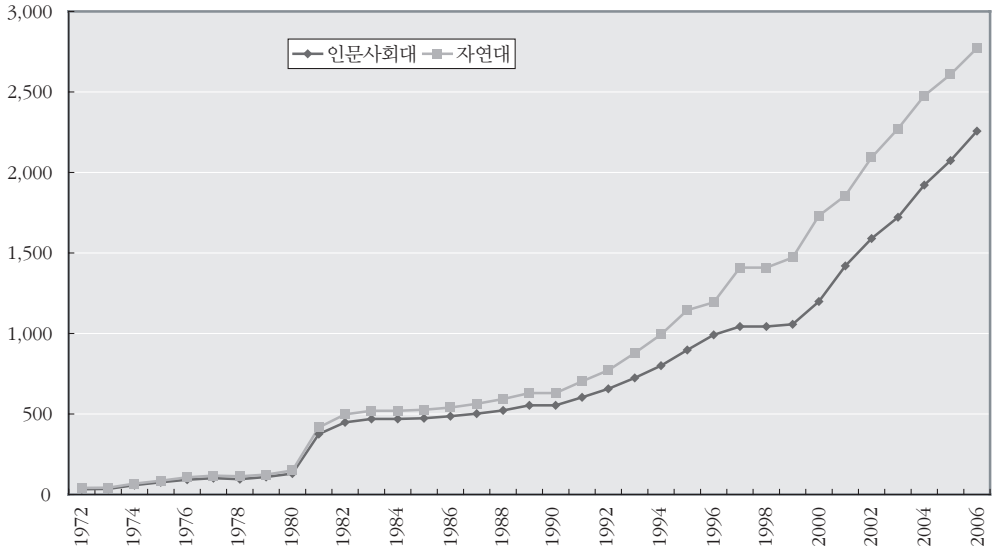
(단위: 원)

연도	학부		대학원		입학금
	인문·사회대	자연대	인문·사회대	자연대	
1972	32,700	40,700	41,200	47,000	1,800
1973	34,400	42,400	42,900	48,700	1,800
1974	58,450	67,450	67,050	72,050	1,800
1975	75,650	85,650	93,100	99,900	1,800
1976	92,100	107,100	99,600	106,400	1,800
1977	101,000	117,500	109,300	116,700	1,800
1978	94,800	113,600	104,600	104,600	1,800
1979	109,000	124,000	124,000	124,000	1,800
1980	130,000	149,000	155,000	155,000	2,250
1981	374,900	416,600	422,800	422,800	70,000
1982	448,000	497,500	466,300	490,000	80,000
1983	469,000	520,000	477,800	514,000	80,000
1984	469,000	520,000	477,800	514,000	80,000
1985	474,000	526,500	474,000	526,500	80,000
1986	486,000	540,000	486,000	540,000	80,000
1987	502,000	563,000	502,000	563,000	80,000
1988	522,000	593,500	522,000	593,500	80,000
1989	554,000	630,000	554,000	630,000	84,000
1990	554,000	630,000	554,000	630,000	84,000
1991	604,000	702,500	621,000	703,500	90,000
1992	656,000	771,500	683,000	770,500	95,000
1993	724,500	878,000	774,500	878,000	100,000
1994	800,000	993,500	891,000	999,500	107,000
1995	897,500	1,144,500	1,029,500	1,158,500	112,000
1996	992,000	1,193,000	1,193,000	1,331,000	118,000
1997	1,043,500	1,409,000	1,295,500	1,445,000	123,000
1998	1,043,500	1,409,000	1,295,500	1,445,000	123,000
1999	1,057,500	1,471,000	1,402,500	1,544,000	123,000
2000	1,198,500	1,731,000	1,649,500	1,808,000	123,000
2001	1,420,000	1,856,500	1,732,000	2,236,500	129,000
2002	1,590,000	2,093,000	1,872,000	2,495,000	135,000
2003	1,722,000	2,272,000	2,030,000	2,712,000	142,000
2004	1,922,000	2,477,000	2,274,000	2,961,000	150,000
2005	2,074,500	2,608,500	2,459,500	3,121,500	154,500
2006	2,257,000	2,771,500	2,682,000	3,320,000	159,000

1) 신입생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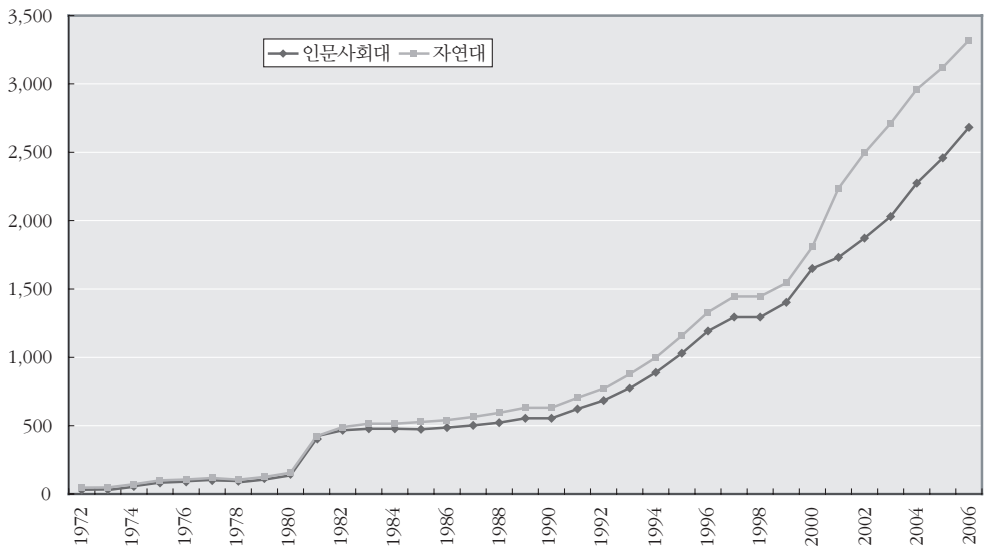
1004 부록

(단위 : 천 원)



학부 등록금 현황(1972~2006)

(단위 : 천 원)



대학원 등록금 현황(1972~2006)

## (5) 장학금 수혜 현황

(단위: 명, %, 원)

연도	인원	수혜율	급여액	1인당 평균급여액
1963	3,037	24.6	12,438,320	4,096
1964	2,947	24.1	13,999,175	4,750
1965	3,762	28.1	19,213,830	5,107
1966	3,812	28.9	19,480,524	5,110
1967	3,931	35.5	26,504,540	6,742
1968	3,833	32.4	22,323,440	5,824
1969	4,380	33.2	36,988,425	8,445
1970	5,129	37.1	49,624,580	9,675
1971	5,896	40.7	56,586,650	9,597
1972	5,823	39.1	93,315,000	16,025
1973	6,737	43.1	108,032,420	16,036
1974	6,802	42.2	135,568,210	19,931
1975	4,807	29.8	151,578,100	31,533
1976	4,669	28.7	185,437,200	39,717
1977	4,824	28.1	220,478,850	45,705
1978	5,356	30.7	343,585,050	64,150
1979	5,698	31.1	519,924,400	91,247
1980	6,581	33.4	798,458,150	121,328
1981	11,890	53.3	1,802,370,000	151,587
1982	17,283	69.9	2,756,638,000	159,500
1983	15,936	57.4	3,244,204,000	203,577
1984	15,676	52.0	3,416,112,000	217,920
1985	15,060	49.6	3,224,362,000	214,101
1986	27,735	48.3	6,622,314,000	238,771
1987	27,768	49.8	6,919,786,000	249,200
1988	27,973	50.6	7,885,933,000	281,912
1989	26,712	48.4	7,583,240,000	283,889
1990	30,161	56.3	8,288,593,000	274,812
1991	27,071	50.8	9,217,098,000	340,479
1992	27,108	49.9	9,823,700,000	362,391
1993	25,732	46.1	10,138,536,000	394,005
1994	26,676	46.6	11,357,103,000	425,742
1995	26,676	46.6	11,357,103,000	425,742
1996	27,302	45.2	13,958,263,000	511,254
1997	27,938	46.0	15,352,389,000	549,5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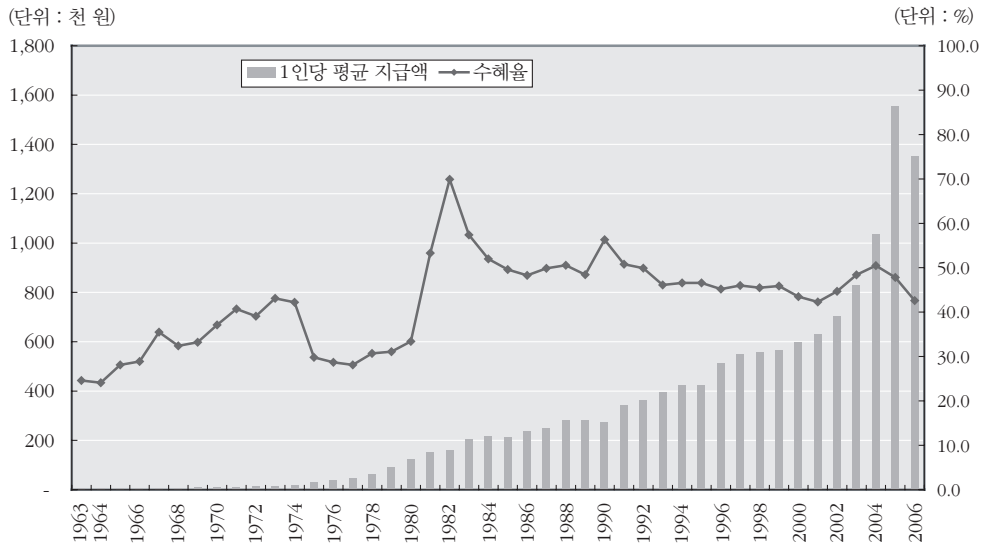
연도	인원	수혜율	급여액	1인당 평균급여액
1998	28,232	45.5	15,721,333,000	556,862
1999	28,268	45.9	15,987,917,000	565,584
2000	26,772	43.5	16,046,182,000	599,364
2001	26,757	42.3	16,884,466,000	631,030
2002	28,147	44.7	19,739,989,000	701,318
2003	30,526	48.4	25,318,447,000	829,406
2004	31,411	50.5	32,518,754,000	1,035,266
2005	29,170	47.8	45,381,526,000	1,555,760
2006	12,886	42.6	17,409,319,000	1,351,026

1) 대학, 대학원 합한 수치임

2) 조사 대상 변경

① 1985년 이전: 1학기

② 1986년 이후: 1학기, 2학기를 모두 합한 수치(단 2006년은 1학기)



장학금 수혜율 및 1인당 평균 지급액(1963~2006)



## (6) 학위 수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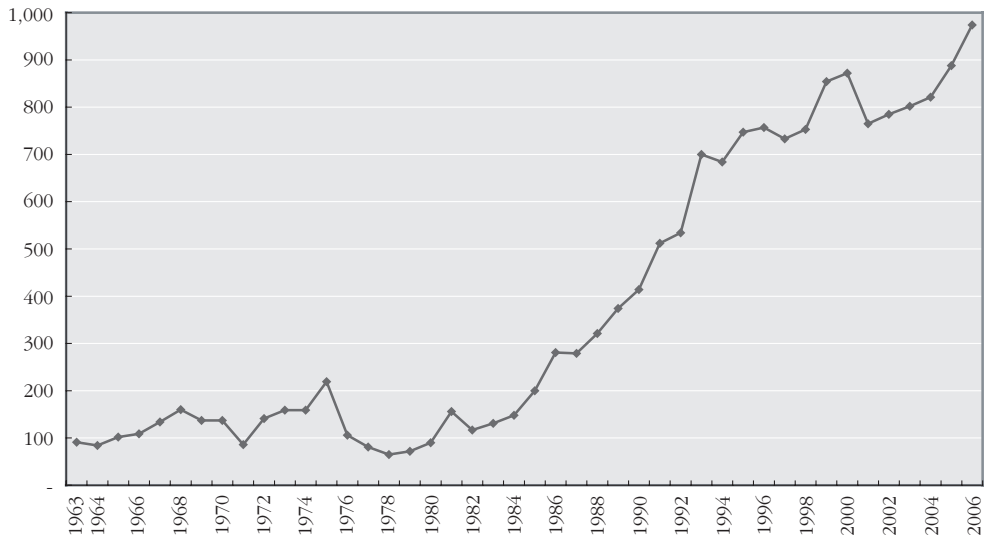
(단위: 명)

연도	학위 수여 수			학위 수여 수 누계		
	학사	석사	박사	학사	석사	박사
1963			91			241
1964			84			325
1965			102			427
1966			109			536
1967			134			670
1968			160			830
1969			137			967
1970			137			1,104
1971			86			1,190
1972			141			1,331
1973			159			1,490
1974			159			1,649
1975			219			1,868
1976			106			1,974
1977			81			2,055
1978			65			2,120
1979			72			2,192
1980			90			2,282
1981			156			2,438
1982			117			2,555
1983			131			2,686
1984			148			2,834
1985			200			3,034
1986			281			3,315
1987	4,992	2,052	279	99,333	22,208	3,594
1988	5,294	2,017	321	104,627	24,225	3,915
1989	5,113	1,943	374	109,740	26,168	4,289
1990	4,883	2,055	414	114,623	28,223	4,703
1991	4,429	2,053	512	119,052	30,276	5,215
1992	4,274	1,988	534	123,326	32,264	5,749
1993	4,165	2,026	700	127,491	34,290	6,449
1994	3,977	2,205	684	131,468	36,495	7,133
1995	4,097	2,154	747	135,565	38,649	7,880
1996	4,314	2,205	757	139,879	40,854	8,6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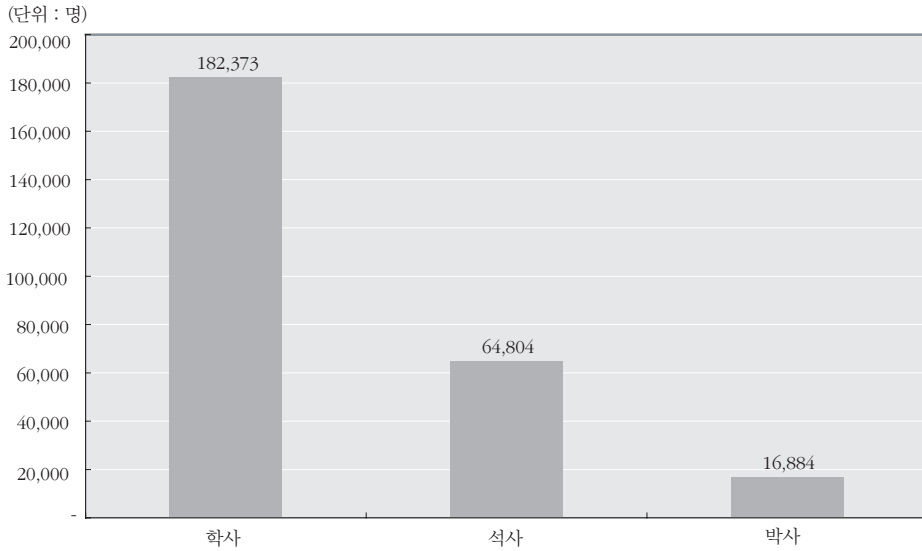
연도	학위 수여 수			학위 수여 수 누계		
	학사	석사	박사	학사	석사	박사
1997	4,419	2,160	733	144,298	43,012	9,370
1998	4,270	2,311	753	146,568	45,323	10,123
1999	4,383	2,438	854	152,951	47,761	10,977
2000	4,359	2,645	872	155,310	50,406	11,849
2001	3,868	2,587	765	161,177	52,993	12,614
2002	4,125	2,260	785	165,302	55,255	13,399
2003	4,185	2,177	802	169,486	57,432	14,201
2004	4,361	2,446	821	173,847	59,878	15,022
2005	4,363	2,442	888	178,211	62,320	15,910
2006	4,161	2,484	974	182,373	64,804	16,884

- 1) 명예박사 제외
- 2) 1987년 이전은 세부 사항 미상

(단위: 명)



박사학위 수여 현황(1963~2006)



학위 수여 수 누계(1963~2006)

## (7) 외국인·재외 동포 학생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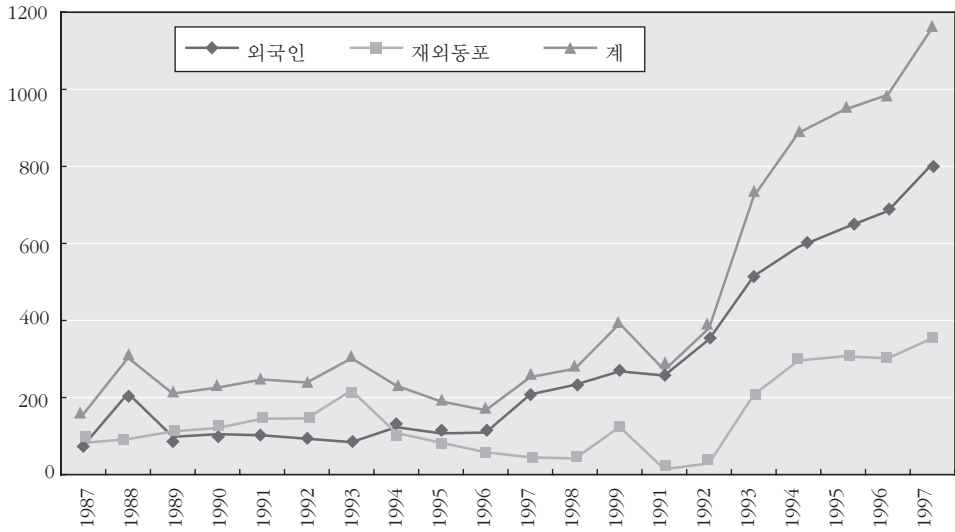
(단위: 명)

연도	외국인				재외동포				계
	학사	석사	박사	소계	학사	석사	박사	소계	
1987				75				82	157
1988				211				92	303
1989				98				112	210
1990				105				121	226
1991				102				145	247
1992				93				146	239
1993				84				218	302
1994				123				108	231
1995				107				83	190
1996				109				58	167
1997				208				45	253
1998				233				42	275
1999				268				124	392
2000	32	154	71	257	14	-	-	14	271
2001	55	195	101	351	28	1	-	29	380
2002	140	254	121	515	201	6	-	207	722
2003	161	284	146	591	269	22	5	296	887
2004	197	301	141	639	285	19	3	307	946
2005	203	327	154	684	288	11	3	302	986
2006	249	371	187	807	331	19	4	354	1,161

1) 1학기 재적생 기준.

2) 2000년 이전은 세부 사항 미상

(단위 : 명)



외국인 및 재외동포 학생수(1987~2006)

(8) 학생 기숙사 현황

학생 기숙사 ①

(단위: 명)

연도	관악사	상록사	녹원사	정영사	왕릉사	합춘사	공대	사법대학원	합계		
	남	남	여	남	남	여	남	남	남	여	계
1965	-	496	84	-	-	84	461	15	972	135	1,107
1966	-	434	60	-	-	88	494(여2)	33	961	135	1,096
1967	-	498	62	-	-	90	560	14	1,072	152	1,224
1968	-	469	54	-	24	90	594	66	1,153	144	1,297
1969	-	499	66	80	20	90	594	64	1,257	156	1,413
1970	-	499	66	104	25	119	594	45	1,267	185	1,452
1971	-	335	53	98	39	153	594	-	1,066	206	1,272
1972	-	501	44	120	36	160	592	-	1,249	204	1,453
1973	-	501	53	118	38	158	594	-	1,251	211	1,462
1974	-	464	54	103	39	160	594	-	1,200	214	1,414
1975	-	361	34	117	47	80	573	-	1,098	114	1,212
1976	630	341	43	78	13	80	594	-	1,656	123	1,779
1977	850	490	33	81	32	87	605	-	2,058	120	2,178
1978	840	366	30	80	42	88	598	-	1,926	118	2,044
1979	856	354	22	84	55	86	600	-	1,949	108	2,057

## 학생 기숙사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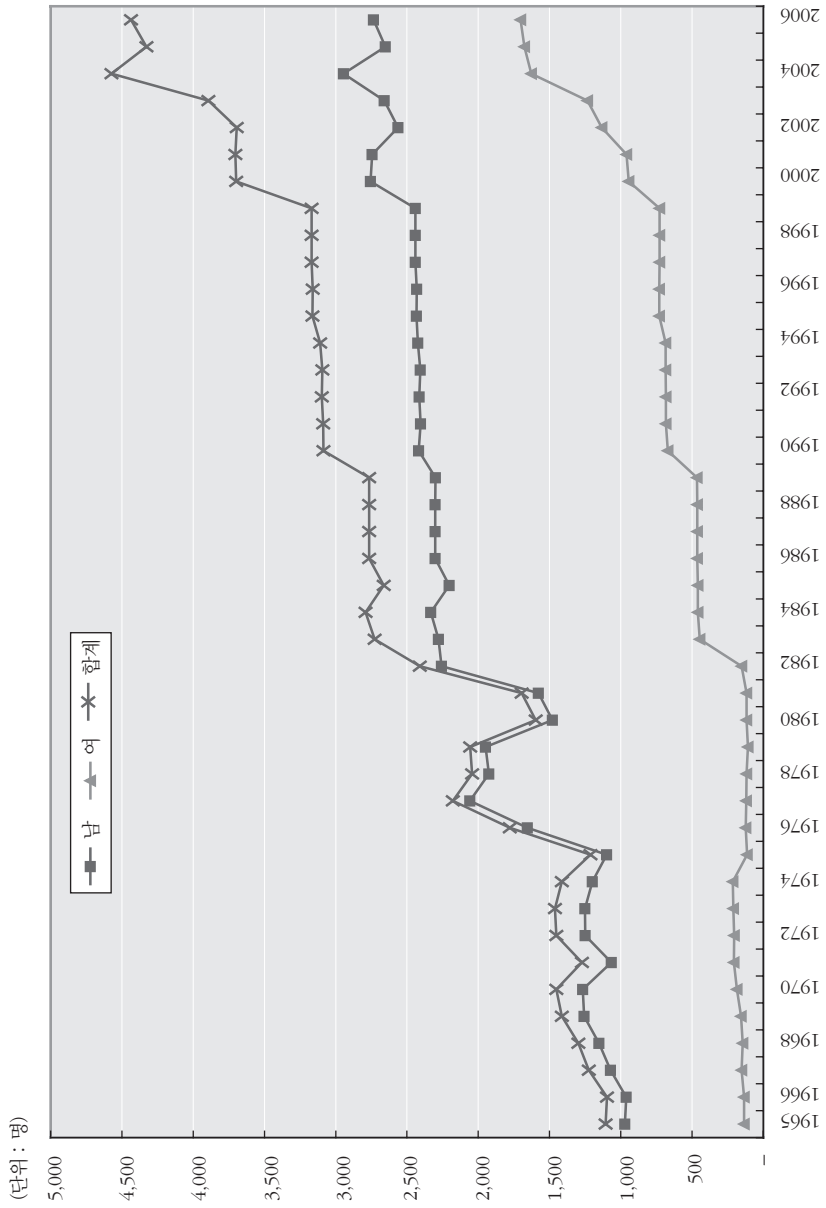
(단위: 명)

연도	관악사		상록사	녹원사	정영사	왕릉사		함춘사	합계		
	남	여	남	여	남	남	여	여	남	여	계
1980	859	-	475	29	86	60	-	88	1,480	117	1,597
1981	1,012	-	419	30	87	60	-	88	1,578	118	1,696
1982	1,656	-	454	45	87	60	-	108	2,257	153	2,410
1983	1,658	282	474	53	87	60	-	112	2,279	447	2,726
1984	1,662	288	523	59	87	60	-	112	2,332	459	2,791
1985	1,662	288	392	60	90	60	-	112	2,204	460	2,664
1986	1,758	292	392	60	90	62	-	112	2,302	464	2,766
1987	1,758	292	392	60	90	62	-	112	2,302	464	2,766
1988	1,758	292	392	60	90	62	-	112	2,302	464	2,766
1989	1,758	294	392	60	90	62	-	112	2,300	466	2,766
1990	1,868	498	392	60	93	64	-	112	2,417	670	3,087
1991	1,868	498	392	60	94	51	14	112	2,405	684	3,089
1992	1,868	498	392	60	102	52	13	112	2,414	683	3,097
1993	1,868	498	392	60	94	53	16	112	2,407	686	3,093
1994	1,884	498	392	60	94	53	16	112	2,423	686	3,109
1995	1,884	498	392	120	92	65	-	112	2,433	730	3,163
1996	1,883	498	392	120	92	65	-	112	2,432	730	3,162
1997	1,884	498	392	116	96	69	-	115	2,441	729	3,170
1998	1,884	498	392	116	96	69	-	115	2,441	729	3,170
1999	1,884	498	392	116	96	69	-	115	2,441	729	3,170

## 학생 기숙사 ③

(단위: 명)

연도	관악사		상록사	녹원사	연건기숙사		함춘사		국제화관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계
2000	2,069	616	392	116	294	100	-	112	-	-	2,755	944	3,699
2001	2,071	615	368	116	306	114	-	115	-	-	2,745	960	3,705
2002	1,889	793	364	114	306	114	3	112	-	-	2,562	1,133	3,695
2003	1,891	793	364	114	382	189	3	112	19	26	2,659	1,234	3,893
2004	2,606	1,256	-	-	321	244	4	110	14	18	2,945	1,628	4,573
2005	2,308	1,300	-	-	323	246	4	112	17	18	2,652	1,676	4,328
2006	2,393	1,307	-	-	318	249	6	124	17	23	2,734	1,703	4,437



기숙사 학생 수(1965~2006)

## 4) 연구기관 및 지원시설

## (1) 연구소 현황

## ① 연구소 설치 현황(2006년 4월)

주관기관	연구시설
본부	통일연구소
인문대학	인문학연구원, 미국학연구소, 인지과학연구소, 철학사상연구소, 역사연구소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연구원, 경제연구소, 언론정보연구소, 국제문제연구소, 심리과학연구소, 사회발전연구소, 국토문제연구소, 여성연구소
자연과학대학	기초과학연구원, 유전공학연구소, 해양연구소, 이론물리학연구소, 미생물연구소, 수학연구소, 생명공학공동연구원
간호대학	간호과학연구소
경영대학	경영연구소, 노사관계연구소, 경영정보연구소, 증권·금융연구소
공과대학	반도체공동연구소, 공학연구소, 신소재공동연구소, 자동화시스템공동연구소, 컴퓨터연구소, 정밀기계설계공동연구소, 뉴미디어통신공동연구소, 에너지자원신기술연구소, 해양시스템공학연구소, 화학공정신기술연구소, 항공우주신기술연구소,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농업생명과학대	농업생명과학연구원, 농업생물신소재연구소
미술대학	조형연구소
법과대학	법학연구소
사범대학	교육종합연구원, 교육연구소, 스포츠과학연구소, 국어교육연구소
생활과학대학	생활과학연구소
수의과대학	수의과학연구소
약학대학	천연물과학연구소, 종합약학연구소
음악대학	동양음악연구소, 서양음악연구소, 오페라연구소
의과대학	의학연구원, 암연구소, 간연구소, 노화·고령사회연구소
보건대학원	보건환경연구소
행정대학원	한국행정연구소, 정보통신행정연구소
환경대학원	환경계획연구소
국제대학원	국제학연구소, 일본연구소
치의학대학원	치학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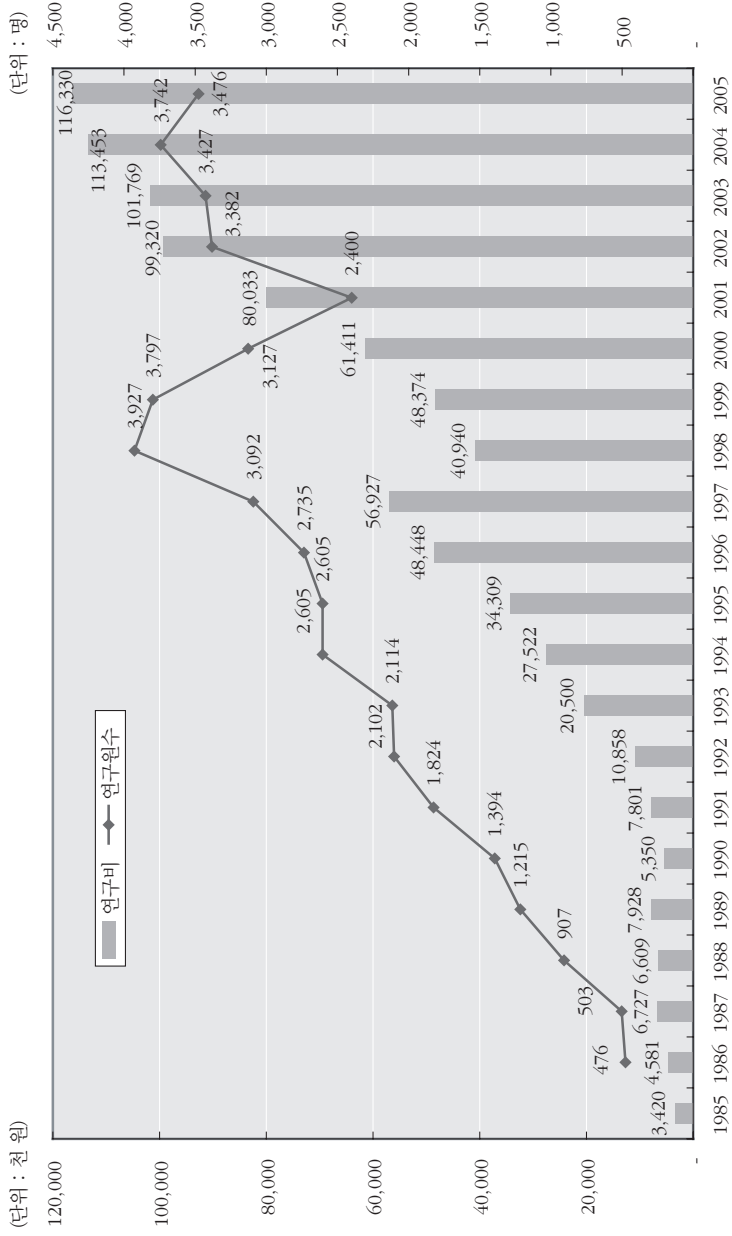
## ② 연구소 현황

(단위: 명, 천 원, 건, 권, 편, 회)

연도	연구원수	연구비	연구건수	정기간행물	부정기간행물	논문	발표회
1985	...	3,420,477	270	20	8	329	39
1986	476	4,580,944	326	22	9	361	35
1987	503	6,726,654	430	23	8	408	47
1988	907	6,608,918	475	23	4	419	67
1989	1,215	7,928,022	405	19	13	342	56
1990	1,394	5,349,556	380	27	17	410	66
1991	1,824	7,800,599	369	36	37	271	86
1992	2,102	10,858,180	435	39	15	286	106
1993	2,114	20,499,782	570	34	15	539	135
1994	2,605	27,521,776	725	50	49	756	203
1995	2,605	34,309,174	887	54	36	928	481
1996	2,735	48,447,896	911	66	32	1,335	398
1997	3,092	56,927,257	1,155	84	38	2,160	829
1998	3,927	40,939,543	1,001	89	47	2,714	829
1999	3,797	48,373,524	826	81	48	2,255	548
2000	3,127	61,411,400	920	71	47	2,728	753
2001	2,400	80,033,481	1,214	133	592	5,337	1,619
2002	3,382	99,320,410	1,595	107	71	3,139	1,480
2003	3,427	101,768,648	1,379	111	94	3,203	2,375
2004	3,742	113,452,659	1,483	119	138	3,427	2,207
2005	3,476	116,329,622	1,338	201	156	3,176	1,655
2006	4,031	...	...	...	...	...	...

1) 조사기간은 매 연도 1.1-12.31까지임





연구소 현황(1985~2005)

(2) 국제학술교류협정체결현황

연번	대학명	국가명	일반합장체결일자	최근 3년간 학생교류 실적	
				파견	입학
1	U.C.L.A	미국	1986.11.10	-	-
2	The University of Sydney	호주	1989.9.27	5	3
3	The Technical University of Budapest	헝가리	1990.1.25	-	-
4	Leningrad Scientific Center	러시아	1990.8.2	-	-
5	Stockholm University	스웨덴	1990.8.3	5	1
6	The University of Tokyo	일본	1990.8.17	3	5
7	Kyoto University	일본	1991.5.21	8	2
8	L'Ecole des Hautes Etudes en Sciences Sociales	프랑스	1991.5.27	-	-
9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캐나다	1991.6.3	25	8
10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Stony Brook	미국	1991.9.1	3	-
11	Th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호주	1991.11.27	4	1
12	Griffith University	호주	1991.12.6	3	-
13	Yanbian University	중국	1992.7.25	-	1
14	Peking University	중국	1993.11.1	-	1
15	The University of Newcastle upon Tyne	영국	1993.11.9	-	-
16	Hitotsubashi University	일본	1994.2.25	4	4
17	The University of Oxford	영국	1994.7.19	-	-
18	The University of Auckland	뉴질랜드	1994.9.14	28	16
19	Freie Universitat Berlin	독일	1994.10.26	2	2
20	The University of Helsinki	핀란드	1995.6.15	4	1
21	University of Washington	미국	1996.7.31	9	10
22	The University of Minnesota	미국	1996.12.2	-	-

연번	대학명	국가명	입면합장체결일자	최근 3년간 학생교류 실적	
				파견	입학
23	Tokyo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일본	1996.12.30	-	2
24	Ritsumeikan University	일본	1997.1.24	-	-
25	The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호주	1997.2.3	5	18
26	Hokkaido University	일본	1997.10.1	7	3
27	The University of Sheffield	영국	1997.10.6	-	-
28	The University of Guadalajara	멕시코	1997.10.27	14	-
29	Colorado State University	미국	1997.11.19	-	-
30	University of Bonn	독일	1997.12.4	5	2
31	Simon Fraser University	캐나다	1998.3.24	7	14
32	The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싱가폴	1998.4.8	10	3
33	L'Universite de Paris Sorbonne	프랑스	1998.6.10	6	1
34	National Taiwan University	대만	1998.6.24	1	3
35	Chulalongkorn University	태국	1998.6.25	-	-
36	Waseda University	일본	1998.6.25	4	4
37	Tohoku University	일본	1998.7.8	5	4
38	Washington State University	미국	1999.12.31	-	-
39	Cairo University	이집트	2000.1.18	-	-
40	Humboldt-Universität Zu Berlin	독일	2000.5.12	7	4
41	M.V. Lomonosov Moscow State University	러시아	2000.5.29	-	-
42	University of Missouri	미국	2000.5.29	1	3
43	Keio University	일본	2000.9.5	6	6
44	Osaka University	일본	2000.10.20	4	1
45	University of Pittsburgh	미국	2000.12.6	-	-

연번	대학명	국가명	입원협정체결일자	최근 3년간 학생교류 실적	
				파견	입학
46	L'Ecole Nationale Supérieure des Mines	프랑스	2001.7.12	-	-
47	Kyushu University	일본	2001.8.21	9	16
48	Ludwig Maximilians Universität München	독일	2001.10.8	3	2
49	Shonan Institute of Technology	일본	2001.11.27	-	-
50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미국	2002.1.5	2	-
51	The University of Melbourne	호주	2002.5.17	3	2
52	Fudan University	중국	2002.6.10	1	3
53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미국	2002.6.16	-	-
54	Shanghai Jiao Tong University	중국	2002.6.18	-	-
55	National University of Mongolia	몽골	2002.10.24	-	-
56	The University of Alberta	캐나다	2003.11.20	-	-
57	Sripatum University	태국	2004.1.7	-	-
58	University of Indonesia	인도네시아	2004.1.26	-	-
59	University of Malaya	말레이시아	2004.1.27	-	-
60	Thammasat University	태국	2004.1.28	-	-
61	Vietnam National University, Hanoi	베트남	2004.1.29	-	-
62	Vietnam National University, Ho Chi Minh	베트남	2004.1.30	-	-
63	Universitat Autònoma de Barcelona	스페인	2004.3.4	-	-
64	Vanderbilt University	미국	2004.3.19	-	-
65	Yale University	미국	2004.3.31	-	-
66	Central University for Nationalities	중국	2004.5.11	-	-
67	Instituto Tecnológico y de Estudios Superiores de Monterrey	멕시코	2004.6.17	-	3
68	University of Chile	칠레	2004.6.25	-	-

연번	대학명	국가명	일민합장체결일자	최근 3년간 학생교류 실적	
				파견	입학
69	Yanbian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중국	2004.7.14	-	-
70	Far Eastern National University	러시아	2004.10.21	-	-
71	University of Toronto	캐나다	2004.12.27	5	-
72	Technical University of Denmark	덴마크	2005.1.27	1	-
73	Universiteit Leiden	네덜란드	2005.1.28	2	1
74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홍콩	2005.2.4	3	6
75	University of Hong Kong	홍콩	2005.2.15	5	-
76	University of Vienna	오스트리아	2005.4.6	-	-
77	Victoria University of Wellington	뉴질랜드	2005.4.12	-	-
78	Renmin University	중국	2005.5.9	-	-
79	Rice University	미국	2005.7.4	-	-
80	University of Northern Iowa	미국	2005.7.19	10	1
81	Ateneo De Manila University	필리핀	2005.7.22	-	-
82	University of Manchester	영국	2005.7.25	-	-
83	University of Santo Tomas	필리핀	2005.9.2	-	-
84	Johannes Kepler University of Linz	오스트리아	2005.9.23	-	-
85	Ecole Polytechnique	프랑스	2005.10.13	-	-
86	National Cheng Kung University	대만	2005.10.18	-	-
87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Diliman	필리핀	2005.10.24	-	-
88	Uppsala University	스웨덴	2005.10.24	-	-
89	The City University, London	영국	2005.11.3	-	-
90	Saint0Petersburg State University	러시아	2005.11.8	-	-
91	Technische University Darmstadt	독일	2005.11.18	-	-

연번	대학명	국가명	입비협정체결일자	최근 3년간 학생교류 실적	
				파견	입학
92	Aoyama Gakuin University	일본	2005.12.7	-	-
93	Mongolian University of Sciences and Technology	몽골	2005.12.7	-	-
94	The University of Oklahoma	미국	2005.12.22	-	-
95	University of Sao Paulo	브라질	2006.1.9	-	-
96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미국	2006.1.24	-	-
97	Sciences Po	프랑스	2006.1.30	-	-
98	Princeton University	미국	2006.1.31	-	-
99	Nagoya University	일본	2006.2.28	-	-
100	Kazakh National Pedagogical University	카자흐스탄	2006.2.28	-	-
101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중국	2006.3.8	-	-
102	University of Economics, Prague	체코	2006.3.27	-	-
계				229	157

## (3) 도서관 장서 및 시설 현황

(단위: 책, 종, 천 원)

	도서자료			자료구입예산			열람석
	단행본	학술잡지	총 장서수	단행본	학술잡지	계	
1963		1,506	779,260				
1964		3,355	810,484				2,387
1965		2,563	825,737				2,863
1966		3,679	850,329				3,340
1967		33,537	861,969				3,415
1968		16,035	877,216				3,346
1969		4,344	894,895				3,346
1970		5,011	889,348				3,641
1971		4,807	877,241				4,048
1972		4,998	901,754				3,788
1973		4,408	926,937				3,788
1974		4,644	948,127				3,786
1975		3,899	938,503				5,323
1976		2,826	982,998				4,607
1977		4,240	980,219				4,499
1978		4,334	1,010,059				4,415
1979		4,422	1,041,559				4,417
1980		4,824	1,072,793				3,983
1981		5,457	1,102,789				4,349
1982		5,553	1,140,587				4,629
1983		5,914	1,167,577				5,384
1984		5,914	1,202,909				5,444
1985		5,955	1,238,038				5,448
1986	31,627	5,956	1,293,980	291,532	500,875	792,407	5,526
1987	38,993	5,994	1,332,685	294,049	570,957	865,006	5,526
1988	41,230	6,082	1,373,886	316,557	639,015	955,572	5,630
1989	47,510	6,098	1,421,377	373,980	724,085	1,098,065	5,630
1990	45,375	6,123	1,466,752	587,971	858,859	1,446,830	5,539

	도서자료			자료구입예산			열람석
	단행본	학술잡지	총 장서수	단행본	학술잡지	계	
1991	46,080	6,323	1,475,640	625,552	927,833	1,553,385	5,694
1992	43,718	7,062	1,389,904	1,108,662	1,662,994	2,771,656	5,265
1993	66,265	8,150	1,456,169	1,225,901	2,077,134	3,303,035	5,259
1994	56,079	9,699	1,512,248	1,381,471	2,072,207	3,453,678	5,725
1995	70,136	10,374	1,582,384	1,768,847	2,450,640	4,219,487	6,397
1996	73,961	11,040	1,656,345	1,975,038	2,962,557	4,937,595	5,993
1997	111,563	12,773	1,767,908	1,719,238	2,578,857	4,298,095	5,949
1998	157,405	13,218	1,925,313	1,579,864	5,139,332	6,719,196	6,262
1999	105,110	13,835	2,030,423	1,051,836	2,108,814	3,160,650	6,297
2000	49,858	9,609	2,111,481	966,373	3,520,757	4,487,130	6,420
2001	80,110	9,974	2,191,591	961,506	3,571,444	4,532,950	6,232
2002	27,138	9,309	2,218,729	723,295	3,714,745	4,438,040	6,226
2003	80,319	9,601	2,369,635	1,063,320	3,466,223	4,529,543	6,185
2004	100,341	10,118	2,470,712	1,337,705	4,726,339	6,064,044	6,160
2005	113,805	10,206	2,584,647	1,731,709	3,985,703	5,717,412	5,939
2006	29,441	10,122	2,614,088	1,595,500	4,950,406	6,545,906	6,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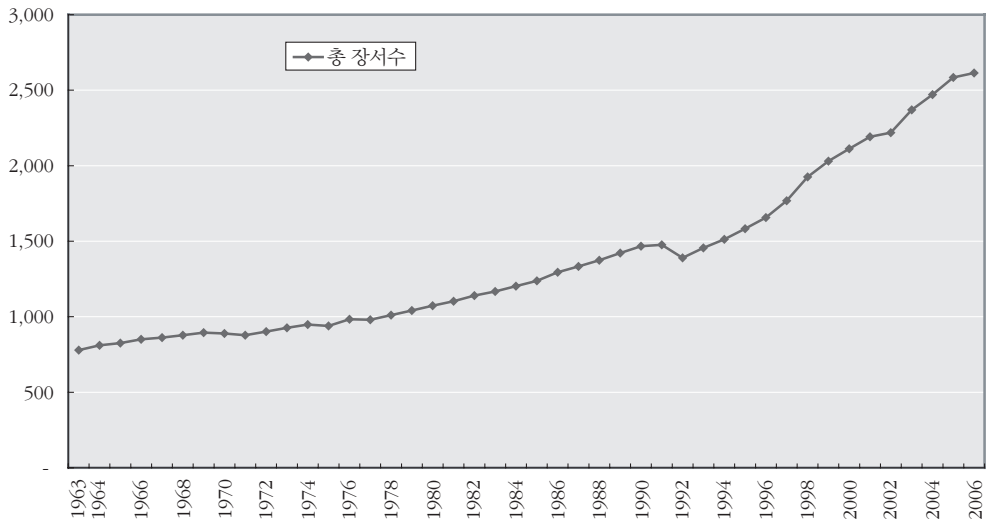
1) 전자자료 미포함

2) 1992년 이후 규장각 분관으로 규장각 자료 미포함

3) 연도말 기준, 2006년은 4월 1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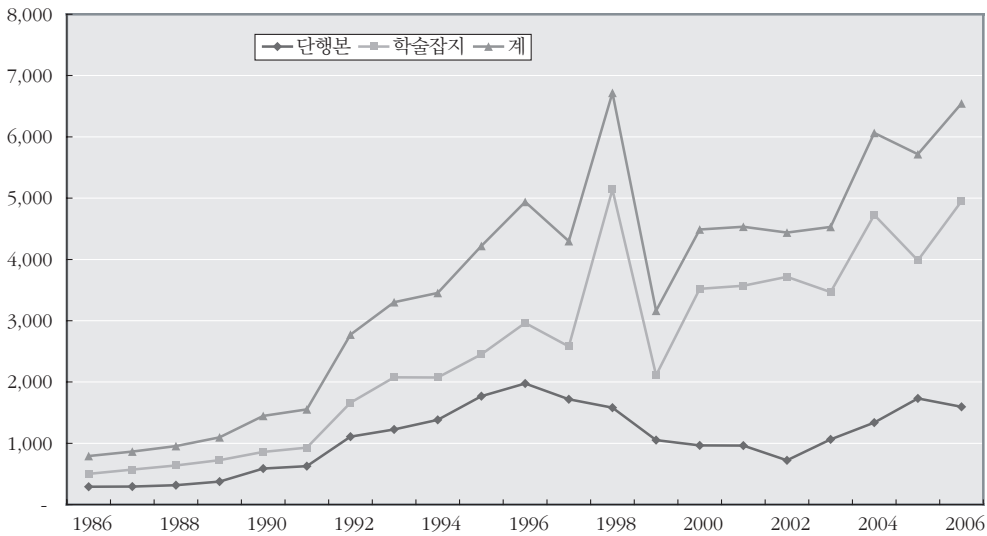


(단위: 천 권)



도서관 총 장서 수(1963~2006)

(단위: 천 원)



도서관 자료구입 예산(1986~2006)

(4) 중앙전산원 시설 및 이용 현황

	시설		이용			서울대전산원-외부전산원 이용		
	PC실습실 수	PC 수	연 사용인원	연 사용시간	학생 1인당 인터넷속도	통신속도	일평균사용량	회선사용률
1998	6	220	730,000	5,840	90Kbps	100Mbps	14Mbps	14.0%
1999	6	220	900,000	5,840	70Kbps	100Mbps	27Mbps	27.0%
2000	6	236	600,000	5,840	45Kbps	100Mbps	74Mbps	74.0%
2001	8	373	620,000	5,840	42Kbps	155Mbps	110Mbps	71.0%
2002	8	373	630,000	5,840	27Kbps	155Mbps	140.25Mbps	90.5%
2003	8	350	585,000	5,840	411Kbps	2465Mbps	673Mbps	27.3%
2004	8	316	498,000	5,840	165Kbps	1465Mbps	유입: 500Mbps 유출: 700Mbps	유입: 34.1% 유출: 47.8%
2005	8	315	459,000	5,840	165Kbps	1465Mbps	유입: 500Mbps 유출: 700Mbps	유입: 34.1% 유출: 47.8%
2006	8	324	511,000	5,840	170Kbps	1600Mbps	유입: 619Mbps 유출: 664Mbps	유입: 38.7% 유출: 41.5%

## 7. 연표

( )안의 숫자는 일자를 표시함

년	월	학 내	사회·교육 일반
1945	11		조선교육심의회에서 새 교육제도 설치를 위하여 9개 분과위원회 설치 (23)
	12		군정청 학무국, 의무교육 방침 발표 (28) 조선교육심의회, 새 교육지침 발표 (21)
1946	1		반탁 학생 시위 전개 (7)
	2		학위령(학사, 석사, 박사, 명예박사) 및 규정 발표 (9)
	3		학무행정권 분리, 각 도에 학무부, 군에 학무과 신설 (7)
	6		남한 26개 전문대학의 수업 연한을 3년에서 4년으로, 중등학교는 4년에서 5년으로 연장 (12)
	7	문교부 국립서울대학교 설립안 발표 (13) 국립서울대안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결성 (31)	
	8	국립서울대학교설립에관한법령 공포, 대학원 외 9개 단과대학으로 발족 (22) 국립서울대학교 초대총장에 앤스테드 임명 (22) 초대 교무처장에 언더우드, 초대 학생처장에 김성덕 취임(22) 생약연구소 설립 (22)	
	9	서울대학교 이공학부 교직원 38명. 국대안 반대하고 사직 결의 (5) 8개 단과대학 개교 (18)	5개 전문학교 학생회에서 국대안 반대 결정 (5)
	10	문리과대학 동맹휴업 (4) 초대 대학원장에 윤일선, 초대 학장에 김동일(공대), 조백현(농대), 이태규(문리대), 고병국(법대), 장이욱(사대), 심호섭(의대), 박명진(치대), 초대 여학생장에 손정	

년	월	학 내	사회·교육 일반
		규 각각 취임 (22)	
	11	초대 사무국장에 이계원 취임	의무교육 전면적 실시, 야간중·고교 설치, 교원 대우 개선 (30)
	12	국대안 반대 사대 교수·학생 전원 복직·복교 (2) 국대안 반대하고 문리과대학 동맹휴업 (10) 국대안 반대 등교 거부로 문리과대학, 상과대학, 법과대학에 휴교 처분 (18)	
1947	1	공과대학에서 조선과학교육자진흥회 개최 (23)	'일군일교제' 를 신학기부터 계획 (4)
	2	이공학부 교수단에서 국대안 철회를 요구 (2) 문리과대학, 상과대학, 법과대학, 공과대학 국대안 반대 동맹휴학 (3) 국대안 철회와 사범대 독립을 요구하고 사범대 동맹휴업 (4) 건설학생회 결성 (9)	시내 일부 중학교, 국대안 반대하고 맹휴 (3)
	3	교복·교모 제정 (2) 국대안 반대로 인한 등록 파동 (3~5) 국대안 수정안 입법의원 통과 (14)	입법위원, 국대안 수정안 통과 규정장관에 제시 (16)
	5		각 여학교에 가사교육 실시 (6)
	6	국대안 맹휴 문제 일단락, 이사회에서 제적 학생 무조건 복교 결정 (13)	
	7	국대안 실시에 의한 의대 2부제 차별로 의전계 학생 총퇴학 결정 (2) 제1회 졸업식 (11)	
	8	국대안 반대 학생 무조건 복교 (특별근신조로 문리대 21명 외 3,497명) (14) 의과대학 내 성대파와 의전계 알력 학사호 문제로 악화, 의전계 교수 50명 사직 (24)	연세대학교에서 신학기부터 최초로 남녀공학 실시 (13)
	9	수의과대학 개교 (12)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이춘호 신임총장 내정자 대학총장 지위에 부적당함을 지적하고 인준 거부 대학원 개원 (25)	
	10	이춘호 총장 인준문제 가결, 제2대 총장 취	규정 문교부, 정규대학 17교, 대학승격준비

년	월	학 내	사회·교육 일반
		임 (25)	3교, 이리농과대학 정식인가, 문교부장인 가의 특수고등교육기관 6교 발표 (15)
1948	3		국민학교 수업료 폐지, 중·전문학교의 수 업료 인상, 국민학교 5,000학급 증설 방침 수립 (11)
	4	문리과대학 연구실분쟁 발생 (15) 이사회, 장학금제 실시에 합의. 국내 최초 로 장학금 급여 규정 제정 (15)	
	5	이춘호 총장 사임, 장이욱 제3대 총장 취임 (12)	재일교포 교육문제 해결 (9) 교육자격 규정 공포, 초·중등교육원에 자 격증 교부 (22)
	8	이사회, 국립서울대학교학칙 확정 (10)	대한민국 정부 수립 (15)
	10		정부 각 기구 결정 (21)
	11		학제 개혁 성안(6, 3, 3, 4제) (16) 중학생 이상의 학도호국대를 조직하고 군사 훈련 실시 (10)
1949	1	최규동 제4대 총장 취임 (4) 국립대학교 편입을 전제로 약학대학 개교 (26)	문교부, 의무교육 6개년계획 수립 (18)
	3		학도호국단 정식 결성 (8)
	4	학도호국단 조직 (22)	
	5		국민학교 적령자를 만9세 이하로 단축 (26)
	6	중등농업교원양성소를 농과대학 내에 설치 (26)	
	8		법률 제41호로 병역법 공포 실시 (6) 정부수립 후 최초로 국비 유학생 6명 도미 (30)
	9	문리과대학 부설 이과중등교원양성소 개설 (1)	
1950	1		고등고시 개시 (9)
	2		학제, 정부안(초 6, 중 4, 고 3, 대 4, 사범 3) 으로 결정(6, 4, 3, 4제) (10)
	3		대학교 전국에 42교, 학생수 28,112명으로 72%가 인문계 (29)
	4		초급대학 15교(공립실업 7, 공립여자 3, 사 립인문실업 5) 설치 (10)

년	월	학 내	사회·교육 일반
	6	제1학기 등록기간 중 한국전쟁 발발로 대학 운영 일시 중단(25)	의무교육 실시 (1) 한국전쟁 발발 (25)
	9	사립 약학대학이 서울대학교에 편입 (30)	
	10	서울대학교 임시 관리 책임자로 김두현 취임 (6)	
	11	문교부 방침에 의하여 서울시내 타 대학과 공동으로 6개 학부의 연합강의 실시	
1951	1	정부와 함께 부산으로 남하 (4)	
	2	부산에서 긴급조치로 연합강의 형식을 취하여 수업 계속 (19)	전시 비상조치로 부산에서 대학 합동 강의 개시 (18)
	3		국회에서 교육법 개정안(6, 3, 3, 4제) 통과, 학년초 9월안 폐기 (7)
	5	대학교육에 관한 전시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전시연합대학 운영 (4)	
	9	최규남 제5대 총장 취임 (3) 농과대학은 수원 본교로 복귀 개강, 잔여 대학은 부산지구에 임시교사 신축하고 수업 실시 (3)	
	12		문교부, 지역별 전시연합대학 학생등록 총수 6,455명 발표 (23)
1952	1		이승만 대통령, 평화선 선언 (18) 국회에서 제2차 개헌안(정부안) 부결 (18)
	2	『대학신문』 창간 (4)	
	3	전시연합대학 해체, 본교생 전원 부산 본교로 복귀 (25)	
	4	제6회 졸업식, 최초로 박사학위 수여 (26)	맥아더라인 철폐 (25)
	5	전시연합대학 해체 (31)	5·26 정치파동(정부, 대통령직선제 개헌강행) (26)
	6	서울대학교 재건 후원재단 설립 (27)	
	7		야간국회에서 발췌개헌안 통과 (4)
	8		직선제 정·부통령선거 실시, 대통령에 이승만, 부통령에 함태영 당선 (5)
	11	대학원위원회, 박사논문 접수 규정 결정 (10)	
1953	1		중앙교육위원회, 중학입시제 국가고사제 폐지 결정 (19)

년	월	학 내	사회·교육 일반
	4	서울분교 개강 (15) 수의과대학, 미술대학, 음악대학 승격 개편 (20)	국립학교 설치령 공포 (20)
	5		중앙교육위원회, 대학입시에 국가시험제도 실시 및 중등학교입학 국가고시제 폐지 결정 (27)
	7		전국에 비상계엄 선포 (8) 이승만 대통령, 반공 포로 석방 (18) 휴전협정 조인 (27)
	8		FOA원조도입 시작 (1)
	9	본부 및 문리과대학, 서울로 복귀 (18)	
	10	본부 및 문리과대학, 미8군으로부터 교사반환 (15) 대학원, 동승동 본부교사로 이전 (26)	국회, 11월 3일을 '학생의 날' 로 제정 (20)
	12	부속도서관 개관 (1)	
1954	3	의과대학 교사 인수 (1)	
	4	단과대학 편입시험(문리대 제외) (2) 의과대학부속병원 개원 (12)	제네바회담 개최 (26)
	5		제네바회의 결렬 (25)
	7		기획처, 경제개발 5개년계획 수립 (28)
	9	미국 미네소타대학교와 원조협정 체결 (5) FOA 180만불 원조 (14)	
	11	FOA 350만불 추가원조	국회, 야당 총퇴장한 가운데 사사오입으로 개헌안통과를 선포 (29)
1955	1		국무회의, 중고교 분리안 통과 (7)
	2	서울대학교 배지 통일키로 결정 (18)	대학설치기준령 국무회의 통과 (17)
	4	졸업학점 160학점으로 축소 (1) 평의원회 신설 (4)	
	7	평의원회에서 졸업자격을 평균 C(대학원은 B) 이상으로 하고 학업성적 학칙 개정 (18)	
	2	성적증명서 복사 업무 개시	
1956	4	교양과목 36학점 취득을 위한 통합 수업(신학기부터)	문교부, 대학교에서 교내 군사훈련 폐지 결정 (4)
	5	이태규 박사, 화학서적 3톤 기증 (29)	정·부통령 선거 실시, 대통령에 이승만, 부통령에 장면 당선 (21)
	7	윤일선 제6대 총장 임명 (19)	

년	월	학 내	사회·교육 일반
	9	기구개편으로 교학국 신설 (6)	
	11	중앙도서관에 특별열람실 신설 (19)	정부, 재학생 징집 연기 잠정령 폐지, 기득권자에 한하여 보류 결정 (11)
1957	3	농과대학 연구실, 실화로 전소 (29)	
	4	대학원에 박사과정 신설 (1) 법과대학 학생, 이강석 입학에 반대 동맹휴업 (10~15)	
	5	보건진료소 개설 (1)	
	6		교육특심위, 치대를 6년제로, 법대를 5년제로 결정 (27)
	9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련의 거부권 행사로 한국의 유엔 가입 거부 (27)
	12	문리대생 유근일 필화사건 (9)	
1958	1	문리과대학에 천문기상학과·지리학과·사회학과·외교학과, 상과대학에 무역학과, 의과대학에 간호학과, 사범대학에 지학과 등을 다음 년도부터 신설기로 결정 (6)	
		미국 미네소타대학교의 원조물자 도입 (12)	
	11	서울대학교 종합계획수립위원회 조직 (19)	
1959	2		대법원, 진보당사건 조봉암, 양명산 피고에 사형 언도 (27)
	3	의과대학 부속 간호기술학교 폐교 (31)	
	4	행정대학원·보건대학원 설립 (1) 본부 교학국을 교무처, 학생처로 분리 (1)	교육공무원 정치활동금지 훈령 발표 (4)
	6	직업보도위원회 발족 (4)	
	8	약학대학 교사와 음악대학 교사 상호교환 이전 (17)	
	9	교직원공제회 창립 (3)	
1960	1		새 민법 발효 (1)
	2	사회과학연구위원회 발족	대구학생데모 (28)
	3		마산서 부정선거 규탄데모 (15)
			국회에서 야당의원 총퇴장한 가운데 이승만·이기봉·정·부통령 당선 공포 (18)
	4	4·19 혁명에 참여 (19)	서울시내 학생 총궐기, 4·19 혁명 개시 (19) 이승만 대통령 대통령직 하야 성명, 재선



년	월	학 내	사회·교육 일반
	5	상과대학생들 어용학자 축출과 무능학자 배척을 위하여 동맹휴업에 돌입 (12) 제1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출생 (23)	거·내각책임제 개헌안 등 결의 표명 (26) 이승만 전대통령 망명 (29)
	6	여학생회 탄생 (3) 문리과대학에 후진국사회연구회 발족 (15) 교수친목회 발족 (19) 약학대학 본관 준공 (21)	내각책임제 개헌안 국회 통과 (15)
	7	서울대 국민계몽대 결대식 (6)	
	8		국회, 장면 국무총리 인준 (18)
	10	학칙 개정, 미술대학 미학과가 문리과대학 문학부로 이관 (10)	
	11	민족통일연맹 결성 (18)	
1961	1	동아문화연구소 설립	
	2	상과대학에 한국경제연구소, 미술대학에 부속실습장, 문리과대학에 고고인류학과, 미술대학에 예술학과 신설 (27) 상과대학 교수 전원 해임 발령 (23)	대일무역제한 철폐 (2) 한·미 경제협정 조인 (8)
	4	대여장학금제 실시 (17)	
	5	육군 제101학도군사훈련단창설 (1) 민통전국학생연맹(가칭) 남북학생회담을 제의, 사회에 파문 서울대학교 종합5개년계획 성안 (15)	5·16 군사 쿠데타, 입법·행정·사법부 장악 (16) '볼즈' 미국무장관서리, 군사정권 인정 발표 (18) 윤보선 대통령 하야 성명 (19) 혁명내각 조직 (20)
	6		학원질서 확립책 시달 (1)
	7		최고회의 의장에 박정희 소장 취임 (2)
	8	서울대학교 출판부 발족 (3) 상과대학 교수진 새로 편성, 교수회의 통과 (28)	교육법 중 개정법률(법률 제680호) 공포 (12)
	9	의료보험제 실시 (7)	
	12	사범대학에 교육심리학과, 교육행정학과, 국어과 등 12개 학과 폐지하고 과학과 사회생활과 신설 (9) 수의과대학이 농과대학 수의학과로 병합 (9) 권중휘 제7대 총장 임명 (17)	

년	월	학 내	사회·교육 일반	
1962	1		공용연호를 서력으로 변경 (1)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발표 (13)	
	2	상과대학 경영학과 신설 (17) 사범대학원 신설, 학생지도연구소 설치 (17)	정치활동정화법 공포 (16)	
	3	교육연구원 신설, 부속국민학교 설치 (12) 결핵연구소 설립 (17) 문리과대학 예산 부족으로 강사 전원 해임	박정희 의장, 대통령 권한 대행 (24)	
	5	서울대학교 종합5개년계획 수립	국·공·사립대학 강사료 지급 규정 제정 (5)	
	6	한미행정협정 체결 촉구 시위 (8) 미네소타계획 6월 말로 종결산 (30)		
	12	교육대학은 본교로부터 분리하고, 교육연수원은 폐지 (31) 공과대학 공업교육과, 농과대학 농업교육과,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신설 (31)		
	1963	1	어학연구소 신설 (1)	
		3	풍토병연구소 설립 (17) 신문연구소 설립 (25)	
		4	교육대학원 설립 (12) 한국경영연구소 설립 (22)	
		5		박정희 의장, 5·16기념식에서 연내 민정 이양 발표 (16)
		6	규장각도서 목록화 (20)	
		7	해양생물연구소, 전력연구소, 한국법학연구소 설치 (1)	
8			교육법 중 개정법률(법률 제1387호) 공포 (7)	
9		암연구소 설립 (12)	대통령에 박정희 공화당 후보 당선 확정 (17)	
10		교육연구소 설립 (21)		
12		보건대학원에 보건통계연구소 설치 (16)	제3공화국 탄생, 새 헌법 발표, 박정희 제5대 대통령 취임 (17)	
1964		3	공과대학 응용수학과, 응용물리학과, 응용화학과 신설 (13) 박대통령 공과대학 방문 시찰 (20) 한일회담 굴욕타결 반대 시위 (24)	한일굴욕외교반대 범국민투쟁위, 회담 즉각 중지 등을 요구하는 구국선언문 채택 (9) 한일굴욕외교반대투위, 전국유세 시작 (15) 서울에 비상계엄령 (25)
		4	한일회담 반대 시위 연일 계속 (21, 22)	서울시내 28개 대학 총·학장들, '정부는 부

년	월	학 내	사회·교육 일반
			정일소, 학생은 학원으로' 라는 결의안 채택 (24)
	5	문리과대학에서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 가진 후 가두로 진출 (20) 300여 교수 시국수습 결의문 채택하고 교권 확립을 굳게 다짐 (27)	
	6		6·3 사태. 학생 1만여 명 데모, 서울특별시 일원에 비상계엄 선포, 집회·시위금지, 언론·출판 사전 검열, 각급 학교 무기휴교 (3) 문교부, 서울시내 대학 총·학장에게 데모 주동 학생들의 처리방안 지시 (5)
	7	신태환 제8대 총장 취임 (7)	비상계엄 해제 (29)
	8	6·3 사태로 인한 피해자 총 85명 (14일 현재)	
	9	학생단체 일제 재등록 실시 (17일까지)	
	10		베트남과 국군부대 파견에 관한 협정 체결 (31)
1965	1		한·일회담 속개 (18)
	3	교복 개정 (신학기) 국민체력과학연구소 신설 (1) 『대학신문』 목요일판 폐지 (2) 교직원 의료보험제 실시	
	4	굴욕외교 반대 시위 (10) 법과대학 시위로 1주일간 휴교 (16~22)	서울시내 대학 거의 휴교 (16)
	5		민중당 창당 선언 (3)
	6	조기방학 실시 (6. 21~8. 20)	
	7	응용과학연구소 신설 (1) 보건진료소 법정기구화 (1)	한·일협정 비준안 및 월남파병 동의안 국회 제출 (12)
	8	인구문제연구소 설립 신태환 총장 및 4개 대학원장, 문리대, 음대, 공대, 상대, 의대, 약대, 미대, 치대학장, 교무·학생 양 처장 사표제출, 제9대 총장에 유기천 법대학장 임명 (27)	한·일협정 비준안 통과 (14) 박대통령 '범법대학교는 폐쇄조치한다' 는 내용의 특별 담화 발표 (25)
	10		문교부, 한·일협정 반대서명 교수들에게 박사학위승인 거부(13)
	11	경영대학원 신설 (24)	

년	월	학 내	사회·교육 일반	
1966	1	의과대학부속병원, 치과대학부속병원 특별 회계제 실시 (1)	사립대 납입금 대폭인상(입학금 100%, 수업료 35%)	
	3		신한당 창당 (30)	
	4		문교부, 학원정화운동 전개 (23)	
	8	국민보건연구소 설립 (30)		
	10	개교 20주년 기념식 거행 (15) 『서울대학교 20년사』 발간(편찬위원장: 유홍렬 교수) (15)		
	11	최문환 제10대 총장 임명 (11)		
	12	약학대학 제약학과 신설 (15)	민주사회당 창당 (22)	
	1967	3	학장회의, 연구교수제 채택 결정 (9)	
5		교양과정부 신설안 확정 (11) 성적카드제 실시 결정 (25)		
6		법과대학생 6·8 총선거 부정규탄 시위 (12) 문리과대학·법과대학·상과대학·사범대학·농과대학·미술대학 시위 (13)	제7대 국회의원 선거 (8) 서울시내 11개 대학 휴교 (13) 전국 31개 대학 136개 고교 휴업 (16)	
7		임시휴업에 이어 조기방학 (5)		
8		농업과학연구소 설립		
11		행정조사연구소 설립 (6) 본교 종합화계획 10개년계획으로 연장 확정 (6) 파리대학과 자매결연 (17) 농과대학 농촌연구부 해체하고 농촌문제연구소로 개편 (22) 문리과대학 학생잡지 『형성』 창간 다음 연도에 공과대학 항공학과, 농과대학 원예학과 및 식품 가공학과, 문리과대학 해양학과 신설과 17개 학과정원 증원, 5개 학과정원을 감원 결정 (24)		
12		신문대학원 및 교양과정부 신설 (14)		
1968		1		무장공비 31명 서울 침입 (21)
		2	서울대학교종합10개년계획 성안	
		4		향토예비군 창설식 (1)
		6	규장각 장서에서 한일합병조약문서 발견 (11)	

년	월	학 내	사회·교육 일반
	7		문교부 중학입시제도 폐지 발표 (15)
	10	1억원 장학기금모금운동 본격화 (10) 교양과정부 이수연한 2년 연장안 확정 (18) 상과대학 상학과·경영학과 통합, 사범대학 가정학과 학부 승격, 사범대학 외국어 전공 학과 개편 결정	문교부, 대학입학 예비고사제 실시 발표 (14) 울진·삼척지구 무장공비 100여 명 출현 (2)
	11	우등생제도 신설 (7)	
	12	사범대학 가정과 폐지하고 가정대학 신설. 가정관리학과, 식품영양학과, 의류학과 설치, 문리과대학 사학과를 신학기부터 국사학과, 동양사학과, 서양사학과로 분리 결정, 공과대학 생산기계공학과, 재료공학과 신설, 사범대학 수학교육학과, 국어교육학과, 외국어교육학과 신설 (24) 학생기숙사 설치 (24)	
1969	2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발족 (12) 한국문화연구소 설립 (12)	
	5		문교부, 외래어 한글표기원칙 발표 (23)
	6	법과대학 학생총회, 헌정수호토론회 개최 (12) 법과대학생 농성 (16) 문리과대학 헌정수호 성토 (17) 연구·논문상 수여제도 신설 (19) 문리과대학생 성토대회 (23) 공과대학·교양과정부생 가두시위 (30)	
	7	공과대학·문리과대학·사범대학·상과대학·약학대학·교양과정부·의과대학·치과대학 시위 임시휴교 (5)	3선개헌반대투위 발족 (17)
	8	최문환 총장, 처벌학생수 발표(무기정화 12, 유기정화 2, 자퇴 7명) (27)	
	9	이한기 법대학장 사의 표명 (5) 음대 휴강을 마지막으로 본교 13개 단대 전면 휴교 (23)	
	10	전면개강 (23)	삼선개헌안 국민투표 실시 (17)
	11		대입예비고사 실시 (18)

년	월	학 내	사회·교육 일반
	12	종교학과·미학과를 철학과에 폐합하고, 미생물학과(문리대), 임산가공학과(농대) 신설(24) 종교·미학·철학과 학생, 3과 폐합 반대선언 (20) 치과대학 새 교사로 이전 (28)	KAL 여객기 납북 (1)
1970	3	본교 종합캠퍼스 부지 관악산 일대로 확정 발표 (21)	
	4	서울대학교설치령 제정·공포 (8) 문리대·법대생, 자퇴생 구제 및 3과 폐합 철회를 요구하고 수업거부 (1) 서울대학교 종합계획추진위원회 구성 (30)	
	6	미술대학 미술관 개관 (20) 재외국민교육연구소 신설 (23)	
	7		경부고속도로 개통 (7)
	11	한심석 제11대 총장 임명 (11)	평화시장 노동자 전태일,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고 분신자살 (13)
1971	2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확정 발표 (9)
	3	교련문제 성토대회 (15)	
	4	관악산 종합캠퍼스 기공 (2) 문리과대학·법과대학 휴강 (13) 한심석 총장, 학생 자중을 당부하는 담화문 발표 (13) 상과대학·사범대학·가정대학(15)·공과대학·교양과정부(16)·약학대학 휴강 (17) 문리과대학·법과대학·상과대학·사범대학·가정대학·공과대학·약학대학·교양과정부 개강 (26)	각 대학에 교련반대 데모 확대 (2) 제7대 대통령선거 박정희후보 당선 (27)
	5	4·27 선거 규탄 성토대회 (3)	
	6	사범대학원 폐지 (10)	
	8	문리대 교수회, 대학자주화 선언 (18) 교수협의회, 대학자율성 보장 요구 (23)	
	10	문리대·법대·상대생, 교련 반대 및 부정 부패 성토 데모 (7) 정부, 학원질서 확립 특별명령과 함께 서울	박대통령 '학원질서 확립을 위한 대통령의 특별 명령' 9개항 및 위무령 발표 (15)

년	월	학 내	사회·교육 일반
	11	시 일원에 위수령(15) 문리대·법대·상대에 군대 진주, 무기휴 업령 (15) 제적학생 163명 명단 발표 (19) 위수군 본고서 철수 (23) 휴업령 해제 (30)	한국천주교 주교단, 부정부패, 빈부차, 도의 타락 등 시정 요구한 공동고서 발표 (11)
	12		박대통령, 국가비상사태 선언 (6)
1972	1	서울대학교 평의원회 발족 언어학과, 조선항공학과, 섬유공학과, 잠사 학과 신설(22)	
	2	국제문제연구소 설립 (16)	
	3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개교 (16)	
	4	인구의학연구소 신설	
	5		문교부 고입 체력장제 발표 (31)
	7	관악종합캠퍼스 건설 착공 (20)	남북공동성명 발표 (4)
	9	미술대학 캠퍼스 교양과정부로 이전 완료 (1)	
	10	비상계엄령 선포로 휴교 (17)	대통령특별선언, 국회 해산하고 전국에 비 상계엄령 선포, 대학휴교, 신문·통신 사 후검열제 실시 (17)
	11		개헌국민투표 (21)
	12	휴교령 해제로 개교 (1)	
1973	1	환경대학원 신설 (25)	미국, 베트남전 전면정지 발표 (15)
	4	'관악캠퍼스' 식수행사, 10만 5천 그루 식 수 (3~11) 공과대학 기계설계학과 신설 (11)	
	6	제1회 대학축전 (19~22)	박대통령, 평화통일에 관한 6·23선언 발표 (23)
	8		김대중씨 일본 동경서 실종 (8)
	9	1974년도 신입생 계열별 모집, 학장회의서 결정 (13)	
	10	유신 반대 시위 관련 학생 23명 제명, 18명 자퇴, 56명 무기정학 (11)	소양강 다목적댐 준공식 (15)
	11	학생들 유신 반대 시위로 조기방학 (27)	
	12	과학교육연구소 설립 (20)	박대통령, 개헌운동 즉각 중지 담화문 발표 (29)

년	월	학 내	사회·교육 일반
1974	1	수의과대학 신설 및 문리과대학에 수의예과 신설(14)	박대통령, 긴급조치 1호(헌법논의 금지), 2호(비상군법회의 설치) 선포 (8)
		배지 문구 서울대로 통일 (24)	박대통령, 긴급조치 3호(국민생활안정을 위한 조치) 선포 (14)
		캠퍼스 이전 1년 연기 발표 (26)	
	2	의학도서관 개관 (16)	
	4	민청학련사건에 서울대생 40명 관련 (25)	박대통령 긴급조치 4호(민청학련 관련활동 처벌) 선포 (3)
		공과대학, 최초로 교수 공개채용 결정 발표 (17)	
	8		닉슨 미국 대통령 사임 (19)
			광복절 기념식전에서 육영수 여사 피격 서거 (15)
	10	현법 개정 요구하는 학생시위 발생 (8)	서울지하철(서울역~청량리간 9.5km) 및 수도권 전철(98.6km) 개통 (15)
		10개 단과대학, 학원 소요로 인한 계고장을 받음 (18, 28, 29)	학생대모로 전국대학 휴교 (18)
	11	제12대 총장에 한심석 총장 연임 (8)	『동아일보』 기자 일동, 자유언론실천 선언 (24)
	12	상과대학 해체·경영대학 신설 계획에 상과대학 반대 (5)	자유언론실천 문제로 『동아일보』 휴간 (12)
문리과대학 백낙청 교수, 민주회복국민회의 참여문제로 문교부로부터 파면 (20)			
종합화계획 본교측 최종안 확정 (31)			
1975	1	관악산 신축 종합교사로 이전 개시 (21)	
	2	서울대생 38명, 구속 300여 일만에 출감 (15)	유신헌법 찬부 국민투표 (12)
		문리과대학 해체식 (18)	
		서울대학교설치령 개정 (28)	
		◎교육기구 개편	
		• 경영대학원·교육대학원·신문대학원·문리과대학·상과대학·교양과정부 폐지	
		• 인문대학·사회과학대학·자연과학대학·경영대학 신설	
		• 법과대학 행정학과·공대 응용수학과·응용물리학과·응용화학과 폐지	
		• 공과대학 재료공학과를 요업공학과로,	



년 | 월

학 내

사회 · 교육 일반

원자력공학과를 원자핵공학과로 개편,  
문리대 천문기상학과 · 고고인류학과를  
자연과학대학 천문학과 · 기상학과, 인문  
대학 고고학과, 사회과학대학 인류학과  
로 분리개편

- 사회과학대학 신문학과, 자연과학대학  
계산통계학과, 공대 공업화학과의 신설

#### ◎소속기관 개편

- 전자계산소, 교육매체제작소, 경제연구  
소, 실험동물사육장 신설
- 부속도서관, 부속박물관, 학생지도연구  
소를 도서관, 박물관, 학생생활연구소로  
개칭
- 상과대학 한국경제연구소 폐지
- 농과대학 부속가축병원을 수의대부속동  
물병원으로 개편

#### ◎관리기구 개편

- 사무국에 조달과, 교무처에 수업과 각각  
신설
- 학생처의 지도과와 장학과를 학생과 · 후  
생과 · 상담지도관으로 분리 개편
- 건설본부장 소속 관리국을 부총장 소속  
으로 이관하여 시설관리국으로 개편하  
고, 그 밑에 관리과를 두며, 운영과를 신설
- 건설본부장 소속의 설계통제실을 건설통  
제실로, 관리국의 기획행정과를 건설국  
의 건설행정과로 명칭변경
- 각 대학(원)의 서무과 · 교무과 · 학생과  
폐지(다만 농대와 치대에는 서무과를 둠)  
하고 대학에 학장보 신설
- 도서관 서무과 · 사서과 · 조사과를 수서  
과 · 정리과 · 참고서지과로 각각 개편,  
규장각 도서관리실 신설

### 3 제1단계 관악캠퍼스 이전 (1)

각 대학 소속에서 각 전공학과 소속으로 교  
수 통합 완료 (1)

년	월	학 내	사회·교육 일반
4		관악캠퍼스에서 첫 입학식 (5)	
		새 캠퍼스에서 첫 개강 (14)	
		학원 민주화 요구 학생시위 발생 (24)	
		'학원자유', '석방학생 복교' 요구 학생 시위 발생 (7)	대통령 긴급조치 7호 (교대 휴교령) 선포 (8)
		축산학과 4년 김상진 자살, 학생 시위 격화 (11)	
		임시휴강 (8)	
		시위 관련 학생 53명 제명, 16명 무기정학 (16)	
		중양도서관 개관 (15)	박대통령, 헌법 비방·반대 금지하는 긴급 조치 9호 선포 (13)
		윤천주 제13대 총장 임명 (27)	
		학국호국단 발단, 1개사단 6개연대로 편성 (30)	
			문교부, 졸업논문제·종합시험제 실시방안 발표 (9)
	8		추가등록제 폐지, 분납제 실시 (20)
		관악사 3개동 개소 (25)	
		약학대학, 관악캠퍼스로 이전 (25~30)	
9		규장각도서 상설 전시 (1)	
		전자계산소 개소 (1)	
10		새 캠퍼스에서 제1회 대학축전 (13~18)	영동·동해고속도로 개통 (14)
12		농업문제연구소 설립	
		교수재임용을 위한 각 대학별 교수재임용 심사위원회 설치 (10)	
		자연과학대학 수의예과 폐지 (31)	
1976	1	1975년도 계열별 입학생 중 자연·가정·교육·농학계열 재학생들 학과 배정 완료 (28)	
		교수 996명 재임용 (28)	
	2	미술대학과 음악대학, 관악캠퍼스로 이전 (28)	
	3	부전공제 실시 발표, 졸업논문제 의무화 (19)	
		1977년부터 입학시험 과목 4개로 축소 (19)	
		의학박물관 개관 (19)	

년	월	학 내	사회·교육 일반
4		동창회 첫 총회 개최 (24) 교수충원 원칙을 공개채용으로 결정 사회과학연구소 신설 (24)	
5		학부 및 각 대학원 학칙을 서울대학교 단일 학칙으로 통합 미국학연구소, 동양음악연구소 설립 (22)	정부, 문교부장관 직송 상설기구로 '국어연 구원' 설립방안 발표 (17) 정부, 유학생 연계조직·국비유학제 방안 발표 (19)
6		학위수여규정 개정	정부,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발표 (18)
7		종합교지 『서울대』 배부 (7) 음향도서실 개관 (13) 1학년 1,900명 문무대에서 첫 집체훈련 (7.24~8.15)	
8		자연과학종합연구소 설립 (20)	
9		인문대학·사회대학 과도서실 폐지, 의과 대학 캠퍼스 내 각 도서관 통합	
10		박사과정 2년으로 단축 『서울대학교 30년사』(판찬위원장 한우근 교수) 발간 (15)	
11		대학원 전공 및 입시제도 개정으로 입학 전 공 제한 삭제	
12		'유신헌법철폐', '긴급조치해제' 요구 관악 캠퍼스 학생 시위. 「민주구국선언문」 배 포 (28)	
1977	3	재외국민교육원 설치 (18) 대학원 신교과과정 제정, 적용 기획위원회 전면 개편, 학사·시설 분과위 설치 (21)	
	5	기초 학문 분야 학술연구 조성비 신청 지침 확정 - 총 5,000만원 규모 대학원 논문제출자격 시험과목 이원화	
	7	서울대학교 건설본부 해체 (21) 대학원연구위원회, 『서울대학교 종합화에 따른 대학원강화책 연구보고』 제출	부가가치세·직장의료보험제 시행 (1) 문교부, '재수생 종합대책 지침' 발표 (23)
	10	각 대학원 교과과정을 하나로 묶는 대학원 교과목 편성 완료 '1920년대 한국민족운동의 고찰' 심포지엄	

년	월	학 내	사회·교육 일반
		<p>관련 대규모 시위·농성 (7)</p> <p>관악캠퍼스 10개 대학·대학원 휴업 조치 (8)</p> <p>관악캠퍼스 10개 대학 기초과정 (25)·관악 캠퍼스 10개 대학 전공과정 (28) 개강</p>	
	11	관악캠퍼스 도서관 점거 농성 (11)	해직교수 29명 해직교수협의회 결성. '민주 교육선언' 발표 (2)
	12	<p>'서울대학교 발전10개년계획의 이념과 목표' 발표</p> <p>대학원 입학시험 시기를 전학년도 2월에서 12월로 앞당겨 실시 (7)</p> <p>공과대학 공업교육과 폐지, 계측제어공학과·전자계산학과 신설(31)</p> <p>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제정 (31)</p>	'반국가행위자처벌 특별조치법 시행령' 공포 (31)
1978	3	<p>도서관 장서 1백만 권 돌파</p> <p>비교문화자료실 개관</p> <p>체육연구소 설립 (10)</p>	문교부, 고교평준화 전국 확대계획 발표 (23)
	4		세종문화회관 개관 (14)
	6		정부, 영해 12해리 선포 (30)
	7	실험대학 운영에 관한 1차 세미나 (27~2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개원 (30)
	8	<p>의과대학부속병원·치과대학부속병원 폐지(16)</p> <p>1979년 입시부터 고교성적 반영 결정</p>	통일주체국민회의, 제9대 대통령에 박정희 후보 선출 (6)
	9	<p>의과대학 조직 개편(학문영역, 연구실, 실습실로 구분하고 학문영역별 주임교수 설치) (1)</p> <p>학생 2천여 명 유신 철폐 요구 시위 (13)</p>	
	10	<p>교수아파트 기공</p> <p>실험대학 운영에 관한 2차 세미나 (10. 19~11. 15)</p> <p>1979학년도 신입생 모집단위 조정(계열별에서 단과대학별 모집)</p>	
	11	<p>교련 F학점시 병역혜택 전면 제외키로 결정</p> <p>유신 체제 철폐 요구 학생 시위 (13)</p> <p>'대학원 특성화계획' 문교부에 제출 (20)</p>	한미연합군사령부 창설 (7)

년	월	학 내	사회·교육 일반
	12	실험대학 운영에 관한 3차 세미나 (25~26) 대학원 입학 정원 대폭 증원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완간
1979	1	새마을운동종합연구소 설치 (18)	동해고속도로 개통
	2		초급대학을 4년제 대학으로 승격개편, 전문 학교를 전문대학으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 (18)
	3	박물관, 전곡리 구석기 유적지 발굴 시작 (26) 실험대학 운영에 관한 종합세미나 (31)	
	4	문교부, 대학원 중점 육성 연구비 6억 5천 만원 배정 통보 (11) 기획위원회, 『서울대 발전 10개년 계획 연구보고서』 발표 (23)	
	5	출판부 관악캠퍼스로 이전 (11) 고병익 제14대 총장 취임 (27)	한국정신문화연구원육성법 시행령 제정 (8)
	7	한국문화연구소 설치(13)	국립대학설치령 개정 (21)
	9	인문과학연구소 설치 (14)	
	10	지도휴학제 실시 계엄령으로 전면 휴교 (27)	내무부,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검거발표 (총관련자 57명) (9) 교육공무원법중 개정법률안 의결 (초·중·고 교장 임명권자 대통령으로 격상, 대학 부총장 보임제) (10) 부마사태 발생 (18)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 (26) 전국에 비상계엄, 최규하 총리 대통령 권한 대행 취임 (27)
	11	대학원 개강 (12) 대학 휴교조치 해제 (16)	
	12	‘학사조정위원회’ 설치 (4) 퇴임교수 23명 명예교수 추대 (7)	통일주체국민회의, 제10대 대통령에 최규하 선출 (6) 각의, 긴급조치 9호 해제 결의 (7) 김재규의 박대통령 시해사건 관련혐의로 정승화 계엄사령관 구속(12·12사태) (12)
1980	1	긴급조치 4·9호 관련 학생 복학 허용 발표 (4) 공과대학 이전 완료 (10)	사립대 등록금 전면자율화 (21)

년   월	학 내	사회 · 교육 일반
2	<p>학생총회 개최 (12)</p> <p>법과대학 법학과를 사법학과와 공법학과로 개편 (23)</p> <p>복학생 총회 개최 (27)</p> <p>74년 민주회복국민회의 선언 관련, 백낙청 · 한완상 교수 복직 발령 (29)</p>	
3	<p>교수협의회 정기총회, 대학자율화 토의 (4)</p> <p>총서클장회의, '서클등록신고제' 의결 (12)</p> <p>학생회부활 추진위원회, '총학생회칙' 확정 (14)</p> <p>단대 학생회 구성을 위한 선거 (17~25)</p> <p>총학생회장 선출 (28)</p>	
4	<p>학장회에서 학도호국단 및 지도교수제 폐지하고, 학생회 인정하는 학칙개정안 통과 (3)</p> <p>환경계획연구소, 치학연구소 신설 (4)</p> <p>'입시제도 개선위원회' 설치</p> <p>총학생회, 계엄 해제 · 언론자유 보장 · 양심범 석방 요구하는 결의문 채택 (16)</p> <p>상당지도관계 폐지, 장학담당관계 신설 (17)</p>	<p>강원도 정선군 사북읍에서 광부 700여명이 임금소폭인상과 어용노조에 불만 품고 소요 (21~24)</p>
5	<p>본교생 1만여 명 '민주화대총회' 에서 계엄 해제 요구 (2)</p> <p>'서울대 민주화투쟁기간' (도서관 철야농성, 경찰과 교문대치) (2~4)</p> <p>휴교령, 캠퍼스에 군부대 진주 (18)</p> <p>입시제도 개선위원회, 「입시제도개선방안 (안)」제출</p>	<p>전국대학생 3일째 가두시위, 30개 대학 10만여명이 서울역 앞에 모여 시위 (15)</p> <p>정부, 비상계엄 전국 확대, 계엄포고 10호 발표(정치활동 중지, 대학휴교, 정치인 연행) (17)</p> <p>5 · 18 광주 민주화운동 (18)</p>
6	<p>휴업령 (23)</p> <p>권이혁 제15대 총장 취임 (30)</p>	
7	<p>변형윤, 김보균, 이명현, 한완상 교수 해직 (30)</p> <p>실험동물사육장 준공 (31)</p>	<p>계엄사, 김대중 등 37명에 대한 내란음모 수사전모 발표 (4)</p> <p>80여 명의 대학교수, 시국과 관련하여 해직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대입 본고사 폐지 · 졸업정원제 실시 등 대학입시제도 개혁안과 '교육정상화 및 과열과의 해소방'</p>

년	월	학 내	사회·교육 일반
			안' 발표 (30) 문공부, 172개 정기간행물 등록 취소 (31) 문교부, 전국 2,597개 출판사 중 617개 출판사 등록 취소 (19) 전두환 국보위 위원장,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제11대 대통령에 당선 (27) 전국대학, 109일만에 정상수업 (12)
	8	대학 휴업령 전면 해제 (28)	
	9	본학기부터 서클등록 허가제, 수강신청시 OMR카드 사용 (12) 졸업정원제에 따라 81년도 입학정원(6,530명), 85년도 졸업정원(5,020명) 확정 (29) 학도호국단 활동 개시 - '제1차 학도호국단 운영위원회 회의' (29)	
	10		제5공화국 헌법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확정 (22)
	12		컬러 TV 방영 시작 (22) 입법회의, 국가보안법 개정안 의결 (30)
1981	1	규장각, 국보급 사료 대량 발견(1. 15~4. 15)	1년 3개월 만에 비상계엄 전면 해제 (24)
	2	사범대학에 국민윤리교육과 신설(28)	제12대 대통령선거인단 선거에서 민정당의 전두환후보 당선 (11) 교육법 개정 (대학입학 예비고사제를 대학 입학 학력고사제로, 교육대학의 수업연한을 4년제로) (13) 사립학교법 개정 (학교법인 설립자와 그 가족의 총·학장 취임 금지) (28)
	3	새 학기부터 전일제 수업 (1) 수강 신청 및 성적 처리 완전 전산화 (1) 종합약학연구소 신설 (24)	
	4	학도호국단, '학원정상화 3단계 조치' 발표 (6)	
	5	학칙 개정(졸업정원제에 따른 학사 감원 규정 신설, 학사 징계 강화) (25) 학내 시위·학생활동 금지 조치 (27)	
	7	졸업정원제 시행에 따른 '전학·전과 규정' 제정 (3)	
	8	정례 학생회의·학생활동 금지 전면 해제	

년	월	학 내	사회·교육 일반
	9	(27)	IOC 총회, 제24회 (1988년) 하계올림픽 개최지를 서울로 결정 (30)
	10	도서관 기본도서실 대폭 확장 (17~18) 박물관, 석기시대유물 특별전시회 (10. 26~11. 7)	문교부, 사범대 '전공'을 '학과'로 승격 발표
1982	1		정부, 야간통금 전면 폐지 (5) 중·고등학교 학생교복 및 두발 자율화 (6)
	2	부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본교에서 분리 독립 (15)	문공부, 이념서적 출판허용 (21)
	3	관악사 4개동, 식당 1개동 증설 개사 (1) 『대학신문』 직제 개편, 학생처 산하기구로 (1)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 (18)
	5	사범대학 각 전공, 학과로 승격, 공과대학 지질학과를 지질과학과로 개칭 (3)	장영자 사건 (7)
	6	환경안전관리소 설치 (7)	
	10	법학도서관 기공식 (8) 노천강당 준공식 (14)	
	11	수의과학연구소 신설 (17)	
1983	2	보건진료소 안과·피부과 신설 (26)	정부, 정치활동 피규제자 555명 가운데 250명 1단계 해제 (25)
	3	여학생 기숙사 개원 (1) 공과대학 요업공학과를 무기재료공학과로, 계측제어공학과를 제어계측공학과로 개칭, 미술대학 회화과를 동양화과·서양화과로, 응용미술과를 공예과·산업미술과로 각각 분리, 인문대학 고고학과를 고고미술사학과로 개칭 (1)	중·고생 교복 자율화 시작 (1)
		4개 실업과목 신설 - 세미나식 완전학습 목표 졸업정원제 탈락 최초 적용	
	4	교목 느티나무, 교조 백조 지정 (4)	
	6	학생활동 금지 해제 (11)	
	7		KBS 이산가족찾기 TV 생방송 시작 (6. 30~11. 14) 우리나라 인구 4,000만 명 돌파(인구밀도 세



년	월	학 내	사회·교육 일반
			계 3위)
	9	인문대학 노어노문학과·서어서문학과 신설 음악대학 오정주, 사범대학 김순택 교수 KAL기 사고로 사망 (1) 기본도서실·지정도서실, 지정좌석제 실시	KAL기, 소련전투기에 의해 일본 북해도 부근에서 피격(답승자 269명 전원 사망) (1)
	10	이현재 제16대 총장 취임 (27)	버마 랭군시내의 아웅산묘소에서 폭탄 폭발, 서석준 부총리 등 17명 사망, 14명 부상 (9)
	12	법학도서관 개관 (12) 조기졸업규정 제정 (30) 학사과정 유급규정 개정 (31)	
1984	2		정부, 정치활동 피규제자 301명 중 202명에 대해 2차 해금조치 (25)
	3	도서관 지정좌석제 실시 기획실 신설 (5) 유전공학연구소 설립 (5) 학생들, 학원자율화추진위원회 구성 (9) 현대사상연구회 신설 (21)	정부, 학원사태 관련 159명 특사 (2) 대학에 상주하던 경찰 철수 남북한 1차 체육회담, 판문점에서 개최 (9)
	4	학원자율화 요구하며 도서관서 3일간 농성 (10~12)	
	5		민주화추진협의회 발족 (18)
	6	첫 계절수업 개강, 6주간 실시 (27)	정부, 1980년 해직교수 복교 허용 (14)
	9	지도휴학제 폐지 (3) 총학생회 부활 (26)	
	10	교내 집회 및 시험 거부 행위와 관련, 경찰 6,400여 명 투입 (23~25) 학생회관 폐쇄 및 자치활동 전면 중지 (25) 박물관 및 전자계산소 기공식 (30)	
	11		대학 학생정원령 개정으로 대학졸업 자격고사에 합격하면 학사학위수여 가능 (26) 민정당사 점거농성 (15)
	12	간연구소 신설 (1)	
1985	1		신한민주당 창당 (18)
	2		구정, '민속의 날'이란 이름으로 공휴일 지정 (20)

년	월	학 내	사회·교육 일반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에 관한 규정 제정 (21)
	3	인문대학 철학과 전공을 철학과·미학과·종교학과로 분리 독립, 사회과학대 무역학과 국제경제학과로 개칭(1) 후생관 개관 (11)	정치활동 피규제자 567명 중 마지막 14명 해금 (6) 학도호국단 설치령 폐지 (21)
	4	문화관 개관 (8)	문교부, 대학 1년생 서클가입금지 규정 폐지 (4)
	5		전국 22개 대학 총학생회대표 26명, 고려대에서 '전국학생총연합회' 결성 (17) 전국 여러 대학에서 38,000여 학생, 광주사태 문제로 시위 (17)
	6		5개 대학생 73명, 서울 미문화원 점거사건 (23~26) 대학입시에 논술고사 병과할 수 있도록 교육 법시행령 개정 (4)
	7	반도체공동연구소 신설 (12) 박봉식 제 17대 총장 취임(22)	
	10	한국조형연구소 설치(2) 기획실, '서울대 발전계획 포럼' 설치 (5) 규장각 신축 공사 착공 (17) 2천여 학생 시위·도서관 철야농성 사태로 학적과 업무 중단 (31)	제40차 IBRD·IMF 서울총회 개막 (8)
	11	도서관 열람실 개실 (12) 민정연수원 점거 관련 69명 구속 (20)	민정당 중앙정치연수원 점거 농성사건 (11)
1986	1		대입 논술고사 첫 실시 (13)
	2	교내에서 철도승차권 발매 시작 (1)	경찰, 전국의 모든 대학에 대한 압수수색 실시 (14)
	3	'총학생회 구성을 위한 비상대의원 총회' 개최 (4) 교육매체제작소 시청각 자료 개방 (17) 생활과학연구소 설립 (21)	고려대 교수 28명, 개헌을 요구하는 '현시국에 대한 우리들의 견해' 라는 시국선언 발표 (28)
	4	교수 48명, '대학의 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의 견해' 라는 시국선언문 발표 (11) 셔틀버스 운행 개시 (14) 전방입소교육거부 움직임과 관련 도서관	천주교 서울대교구 명동성당, 개헌서명운동 돌입 (13) 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능 유출사고 발생 (26)

년	월	학 내	사회·교육 일반
		휴관 (26~30) 김세진(미생물학)·이재호(정치학) 전방입 소 반대 시위 중 분신 자살 (28) 자연과학대학 기상학과를 대기과학과로 개 칭 (30)	
	5	대학원생 630여 명 시국선언문 발표 (2)	
	6	체육관 준공식 (12)	서울대 등 23개대 교수 265명, 정통성을 지 닌 민간정부의 출현을 바라는 시국선언문 발표 (2)
	7		정부, 미국의 압력으로 양담배 시장 개방 결 정 (21)
	8		국립 중앙박물관 이전 개관 (21)
	9	본교 체육관에서 아시안게임 탁구경기 개 최 (9. 22~10. 2)	제10회 서울 아시안게임 개막 (9. 20~10. 5)
		학위수여 규정 개정 (30)	
	10	개교 40주년 기념행사(13~22) 『서울대학교 40년사』(편찬위원장 한영우 교수) 발간 (15)	26개 대학생 2,000여 명, 건국대서 3일간 철 야 농성 (28~31)
	11	미국 U.C.L.A와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 (10)	
	12	한국정치연구소, 해양연구소 신설 (24)	
1987	1	박종철(언어학과),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 문치사 (14) 학생들, 「국민주투사 박종철학우 추모제 및 살인정권 타도를 위한 쫓기대회」 개최 (20)	
	2		검찰, 지하운동권 조직 '제헌의회그룹' 적 발. 24명 구속 (3)
	3	학생성적 상대평가제 폐지 결정 (2) 전방입소훈련 선택제 변경 결정 (2)	
	4	'서울대학교 발전장기계획 1차년도 운영계 획' 확정 (16)	전두환 대통령, '4·13 호헌조치' 발표 (13)
	5	교수 122명, '현시국에 대한 우리의 견해' 라는 제목으로 개헌과 민주화를 촉구하 는 성명 발표 (1) 석·박사과정 대학원생 1,280명, '4·13	통일민주당 창당 (1) 서머타임제 부활 (10) 민주당과 재야단체를 망라한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 발족 (27)

년   월	학 내	사회 · 교육 일반
	호헌조치 즉각철폐, 민주적 개헌과 민중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는 시국선언 발표 (8)	
6	학생들, 개헌과 민주화를 요구하는 6월 민주화대투쟁에 참가 (10~26)	연세대학생 이한열, 시위도중 최루탄에 맞아 사망 (9) 6·10 시위 발생. 민정당 전당대회에서 노태우대표를 차기 후보로 추대 (10) 노태우 민정당대표, 대통령 직선제를 포함한 '6·29 선언' 발표 (29)
7	연구처 신설, 연구진흥 및 연구지원업무 수행 시작 (1)	현대중공업 등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노동쟁의 확산 (31)
8	'서울대 발전장기계획' 확정 (7) 조완규 제18대 총장으로 취임 (14)	전국 95개 대학생 3500여 명, 충남대에서 전국 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결성 (19)
9	1983년 12월 21일부터 1987년 7월 10일 사이 학생활동과 관련 제적 학생의 재입학을 위한 특례규정 마련 (1) 교수협의회, 부활 임시총회 개최. 회장에 변형운 교수 선출 (4) 전자계산소, IBM 3090-150 시스템 가동식 (22)	
10	대학원자치회협의회 구성 (1) 기초과정 시험 실시 방법 변경, 75년 1학기 이후 수업과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던 기초과정의 중간·기말 시험을 이번 학기부터 담당교수별로 실시 (5) 총장과 학생대표 간담회, 문화관의 학생 이용 허용 결정 (16) 교수협의회 산하 대학자율화추진위원회 구성 (30)	국회, 직선제 개헌안 의결 (12) 대통령 중심제의 개정헌법 공포 (29)
11	신경과학연구소 신설 (25) 총학생회, 공정선거 감시운동본부를 구성하여 대선활동에 적극 참가 (26)	민주당, 김영삼을 대통령후보로 추대 (9) 평민당, 김대중을 대통령후보로 추대 (12)
12		13대 대통령 선거, 노태우후보 당선 (16) 정부, 1988년 1월 1일을 기해 전국 51개 군과 255개 읍면의 통행금지 해제 발표 (23)

년	월	학 내	사회·교육 일반
1988	1	故 박종철열사 추모제 거행 (16)	최저임금제 실시 (1)
	2	학사제명 폐지, 학생 정치활동 금지 삭제,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소비자아동학과로 명칭 변경 등의 내용을 담은 학칙 개정 (22)	
	3	교수협의회, '서울대학교 자율화지침' 발표 (9) 경제학과 대학원생, 정치경제학 전공 교수 임용 요구 (18) 편집국장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대학신문사칙 개정 (20) 1973년 이후 제명자의 재입학이 가능하도록 재입학에 관한 특례규정 개정 (21)	헝가리, 동구권국가 최초로 한국에 무역사무소 설치 (24)
	4	정치학과 학생, 김학준 교수 퇴임을 요구하는 농성 돌입 (6) 교수협의회, '대학자율화에 대한 우리의 입장' 결의문 채택 (8) 국학연구진흥위원회 설치 (11) 생약연구소, WHO 전통약물연구 협력센터로 지정 (12)	정부, '광주사태' 를 민주화를 위한 운동으로 규정 (1) 제13대 국회의원선거 실시. 여소야대 상황 출현 (26)
	5	서울대학교 노동조합 결성 (13) 조성만(화학과), 명동성당에서 투신 자살 (15)	지방자치법에 따라 서울 등 전국 50개 구가 자치단체로 격상 (2) 한겨레신문 창간 (15)
	6	6·10 남북 학생회담 대표단 구성 (4) 신소재공동연구소, 약학교육연수원 신설 (17)	서울지검, 학술단체연합 심포지엄과 관련하여 충북대 서관모 교수 소환 (16)
	7		노태우 대통령, 남북동포 교류추진 등 대북 선언 6개 항의 이른바 7·7 특별선언 발표 (7)
	8		문교부, 사실상의 총장직선제 허용 (8)
	9		정부, 미8군 용산기지 이전 합의 (10) 문교부, 대학생 과외 허용 결정 (1) 제24회 서울올림픽 개막 (9. 17~10. 2)
	10	겸임교수규정 제정 (22) 자동화시스템공동연구소 신설 (22)	
	11	문화관 사고로 숨진故 심재훈(성악) 장례식	국회 광주특위·언론특위 청문회 개최

년	월	학 내	사회·교육 일반
		거행 (19)	(18·21) 전두환·이순자 부부, 대국민 사과문 발표 하고 백담사행 (23)
	12	기초과학전국공동기기센터 신설 (24)	금리자유화 실시 (5)
1989	2	자율적발전방안연구위원회, 총장 선출 방 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 (28)	헝가리와 정식국교, 정부수립 41년만에 공 산권과 첫 수교 (1)
	3	'서울대학교 부속 및 부설연구소 설치에 관 한 규정' 제정 공포 (11) 통계연구소, 노사관계연구소, 서양음악연 구소 신설 (11)	주 44시간 노동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통 과 (6) 노태우 대통령, '중간평가 국민투표의 백지 화' 선언 (20) 문익환 목사 일행 평양 방문, 김일성과 회담 (25)
	4	체육관 시설 전면 개방 (10)	
	5	도서관, 컴퓨터로 문헌 검색 서비스 실시 (1) 도서관, 특수자료 2,959종 개방 (4)	부산 동의대 농성 대학생들의 방화로 경관 6 명 사망 (3)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 (28)
	6	철학사상연구소, 경영정보연구소 신설 (14)	전대협, 임수경을 평양축전 대표로 북한에 파견 (30)
	7	정밀기계설계공동연구소, 불어문화권연구 소, 소련동구연구소, 스페인중남미연구 소 신설 (3) '발전장기계획 수정소위원회' 구성, 기존계 획 평가를 위한 공개모임 건의 (20)	
	8	교내 주차 관리 지침 시행 결정 (21) 전체 교수의 직접 투표를 통한 총장 선출 방 안 확정 (24) 『대학신문』 전면 가로쓰기 실시 (28)	정부, 토지공개념추진위 설치 (23)
	9	호주 시드니대학과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 (27)	노태우 대통령,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제 시 (11)
	10	컴퓨터신기술공동연구소, 종교문제연구소, 의공학연구소 신설 (5) 1989년 하반기부터 교수정년퇴임식을 각 단과대학에서 주관 (5) 연구처, 법정기구로 공식 출범 (28) 생산기술연구소, 본부 직할로 승격 및 공학 연구소로 명칭 변경 (28)	세계성체대회 '장엄미사',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집전. 신자 65만 명 참가 (8) 정부, GATT 국제수지위원회 비공식회의에 서 '한국의 수입제한조항 졸업안' 수용. 90년부터 완전한 수입개방체제로 이행 (27)

년	월	학 내	사회·교육 일반
	12	교양교육제도 개선 종합 방안 확정 (6) 지역연구종합센터, 사회체육지도자연수원 신설 (20)	소련과 영사관계 수립 (8) 전두환 전대통령, 국회 광주·5공특위 청문 회에 증인으로 출석 (31)
1990	1	영연방연구소, 독일학연구소, 예술문화연 구소, 국토문제연구소, 사회복지연구소, 수학연구소, 이론물리학연구소, 분자과 학연구소, 광물연구소, 환경의학연구소 신설 (5) 헝가리 부다페스트 공과대학과 국제학술교 류협정 체결 (25) 학칙개정으로 교련과목 삭제 및 교양과목 조정, '대학원 연구생제도' 신설, 공대 전 자계산기공학과가 컴퓨터공학과로, 농대 잠사학과가 천연섬유학과로 명칭 변경 (29)	재무부, 자본시장 개방에 따라 91년부터 외 국증권사의 국내진출 허용 (11)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김종필 씨와 삼당 합당을 선언 (22)
	2		정부, 한전·국민은행 등 8개 공기업의 민영 화 결정 발표 (15)
	3	의과대학 기초의학연구동 준공 (16) 학술정보 전산화 계획 확정 발표 (19) 호암생활관 준공 (24)	
	4	이론물리학연구센터, 분자미생물학연구센 터, 신소재박막가공및결정성장연구센터, 한국과학재단에서 우수연구센터로 지정 (17)	
	5	행정조사연구소, 한국행정연구소로 명칭 변경 (5) '재단법인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정식 승 인, '서울대학술연구재단' 과 '서울대학 교 장학회' 통합 (25) 전국강사노조 서울대학교 분회 결성 (30) 일부 학과에서 석·박사과정 연계 운영 실 시, 총 91명 선발	장을병 교수 등 57개 대학 교수 1,041명, 민 자당 해체와 토지공개념 촉구하는 시국선 언 발표 (7)
	6	규장각, 신축 건물로 이전 완료	노태우 대통령, 고르바초프와 샌프란시스코 에서 첫 정상회담 (5)
	7	'캠퍼스계획위원회' 구성, '공간활용조정 위원회'와 '건축심의위원회' 의 통합 (3)	정부, '8·15 범민족대회'에 남한 측 인사들 참가 허용 (23)

년	월	학 내	사회·교육 일반
		신소재공동연구소 준공 (4)	재무부, 91년부터 외국인 투자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 발표 (26)
8		소련 레닌그라드 한립원 (2), 스웨덴 스톡홀름 대학 (3), 일본 도쿄대학 (17)과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 중앙교육연구전산원 SNUNET(서울대학교 캠퍼스 전산망) 개통 (22)	
9		교수 등 학자 3천여 명 UR 반대서명 (17)	서울에서 첫 남북고위급회담 개최 (4) 전농·국민연합 등, '우루과이라운드 무역협상 거부대회' 개최 (28)
10		기초전력공학공동연구소 준공 (10)	
11		비교문화연구소 설립 (20) 세계경제연구소, 미생물연구소, 사회교육연구소 설립 (21)	
12		기초과정 제도 폐지, 학기 외 학점 취득 및 타대학 학점 인정 제도 신설 등 내용 담은 학칙 개정(4) 서울대 천문대 개관 (6)	노태우 대통령, 소련 공식 방문 (13~17)
1991	1	도서관 전산화 사업 확정 (5) 학장회, '외국대학과의 학점 상호인정에 관한 규정' 확정 (17) 경영대, 선경경영관으로 이전 (31)	
	2		전국 교무처장회의, 고교내신과 본고사만으로 뽑도록 하는 대학입시 자유화 방안 제시 (7)
	3	동물학과·식물학과·항공학과, 각각 분자생물학과·생물학과·항공우주공학과로 명칭 변경 (1) 대역해석학연구센터, 세포분화연구센터, 제어계측신기술연구센터, 터보동력기계연구센터, 신의약품개발연구센터, 암연구센터, 농업생물신소재연구센터 개소 (20)	안기부, 사노맹 사건 관련 '얼굴없는 시인' 박노해 씨 구속 (12)
	4		교육부, 대학별 본고사부활 및 내신성적 40% 이상 반영하는 새 대입제도 발표 (2) 평민당과 제야의 신민주연합 통합, 신민주



년	월	학 내	사회·교육 일반
			연합당 창당 (9) 고르바초프 대통령, 소련 국가원수로는 처음으로 한국 방문 (19) 명지대학생 강경대, 총학생회장 석방요구 시위 도중 사망 (26)
5		본교 교수 55명, 근본적 민주개혁을 요구하는 성명 발표 (8) 학생들, 강경대(명지대) 죽음을 계기로 '민자당 해체와 공안통치 종식을 위한 결의대회' 개최 (9) 박물관 고고학 조사단, 한반도 최고 탄화미 발굴 (20) 일본 교토대학 (21), 프랑스 국립사회과학대학원과 (27)과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	서울시내 17개 대학 총장, 평화적 시위보장 촉구, 대학생들에게 분신 등 과격시위 자제 호소 (2) 유서대필사건 (18) 미국 국방부, 주한미군 감축계획에 따라 1단계 조치로 7,000명의 철수 시작 (19) 정원식 국무총리서리, 외국어대 마지막 강의 후 학생들에게 집단 폭행 (3)
6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창립총회 개최 (1)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과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 (3) 사회학과, 교수임용에 학생의사 반영키로 결정 (3) 뉴미디어기술공동연구소, 물성과학연구소, 축산과학기술연구소, 심장연구소 신설 (17)	
7		임업과학연구소 설립 (9) '전산화조정위원회' 설치 (9)	
8		도서관 대출 시스템 전산화 및 '인켈음영자료실' 설치 (8) 김종운 제19대 총장 취임 (14)	
9		미국 스토니브룩 뉴욕 주립대학과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 (1) 공업화학과 박사과정 한국원, 경찰의 총기 오발로 사망 (17)	유엔총회, 남북한 유엔가입안 만장일치로 통과 (18)
10		'대학교육협의회' 방문 평가 실시 (11~12)	
11		에너지자원신기술연구소 신설 (25) 호주 국립대학과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 (27)	정부,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확정 발표 (12)
12		호주 그리피스대학과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	새 민영방송 서울방송(SBS) 개국 (9)

년	월	학 내	사회·교육 일반
		<p>결 (6)</p> <p>심리과학연구소, 대기환경연구소, 증권금융연구소 신설 (24)</p>	<p>제5차 남북고위급회담 서울에서 개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 (13)</p> <p>남북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최종합의 (31)</p>
1992	2	재정위원회 설치 (15)	
	3	<p>생약연구소, 천연물과학연구소로 명칭 변경 (1)</p> <p>농과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으로 명칭 변경 (3)</p> <p>의과대학 간호학과를 간호대학으로 개편(6)</p> <p>도서관을 부속시설에서 대학수준의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으로 격상, 규장각 도서관리실을 도서관에서 분리 서울대학교 부속 규장각으로 개편 (6)</p> <p>새마을종합연구소 폐지 (6)</p> <p>총학생회, 김일성대학과 자매 결연 추진 (10)</p>	
	4	<p>조선공학과, 입학과, 축산학과, 임산가공학과를 조선해양공학과, 산림자원학과, 동물자원학과, 임산공학과로 명칭 변경 (20)</p> <p>학사과정 입학정원에 전기·전자·제어계측공학군을 신설 (20)</p> <p>재외국민교육원, '국제교육진흥원'으로 본교에서 분리 독립</p>	<p>정부 'UR 농산물협상이행계획서' 마련, GATT에 제출 (10)</p>
	5		<p>제7차 남북고위급회담 서울에서 개최. 남북간의 8·15 고향방문단 교환과 기본합의서 이행기구 발족문제 완전 타결 (5)</p> <p>국가안전기획부, 지하혁명조직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건 발표 (15)</p>
	6	연구처, 『서울대학교 연구소 업적집』 발간	정부, 지구정상회담에서 체결된 기후변화협약과 생물다양성 협약에 전격 서명 (14)
	7	중국 연변대학과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 (25)	
	8		과학위성 '우리별 1호' 발사 (11)

년	월	학 내	사회·교육 일반
	9	‘발전기금조성위원회’ 및 ‘발전기금조성추진위원회’ 구성 (7) 박물관 준공식 (25)	삼성전자, 최첨단반도체인 64메가 D램을 자체개발 (25)
	10	‘학사운용쇄신방안’ 발표 (14)	
	11	사범대학 교직 이수규정 대폭 개편 (2) 본교와 뉴욕주립대, ‘한국학연구총서’ 공동간행 결정 (9) 정보통신행정연구소 신설 (10) 국어교육연구소, 농업과학공동기기센터 신설 (25)	대덕연구단지 준공 (27)
1993	2		제14대 김영삼 대통령 취임 (25)
	3	학장회, ‘연구비중앙관리 및 간접연구경비제도 시행’ 확정 (4) 사회과학대학, 일부 과목 참여강의제 실시 (15)	정부, 비전향 장기수 이인모 씨 북한으로 송환 (19)
	4	중앙도서관, ‘UnCover 시스템 2’ 도입으로 최신 학술잡지·논문 신속 입수 가능 (1) 섬유공학과, 섬유고분자공학과로 명칭 변경 (21)	
	5	농업생명과학대대학, 농업과학사 박물관 개관 (4)	청와대, 12·12사태를 ‘쿠데타적 사건’이라고 규정 (13) 5·18 민주항쟁 13주기 추모식, 민관합동으로 치러짐 (18)
	6	농업과학공동기기센터 개소 (4)	
	7		정부, 신경제 5개년계획안 발표 (2) 공직자 윤리법시행령으로 4급 이상 공무원 3만여 명의 재산등록 일제 실시 (12) 국방부, 소말리아에 육군 상륙수부대 파병 (30)
	8		대전 엑스포 개막 (6) 금융실명제 실시 (12) 제1차 대학수학능력 시험 전국 실시 (20)
	9	경제문제연구소 문헌자료실 ‘EC 문헌센터’로 지정됨 (13)	
	10	종합화(농·수의대 이전) 추진기획단 구성 (20)	

년	월	학 내	사회·교육 일반
	11	중국 북경대학 (1), 영국 뉴캐슬대학 (9)과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	
	12	해양시스템공학연구소 신설 (10) 오페라연구소 신설 (22) 한국화약그룹, '김승연장서기금' 250억 출연 완료 (31)	김영삼 대통령, 쌀개방과 관련 특별담화문 발표 (9)
1994	2	의과대학, 직선제로 학장 선출 결정 (7) 일본 히토즈바시대학과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 (25)	정부, 75개 공기업 민영화계획 확정 (18) 문화체육부, 일본 대중문화개방 3단계로 대책 마련 (24) 교육부, 수학능력시험 연1회 실시를 골자로 한 대입시안 확정 발표 (28)
	3	신문연구소, 인구의학연구소, 인문과학연구소 각각 언론정보연구소, 의학연구원, 인문학연구소로 명칭 변경 (1) 중앙도서관, 세계은행 기탁도서관으로 지정되어 유엔자료실 개설 (23) '자체평가연구위원회' 구성, 교육·연구·사회봉사 등 7개 부문에 대한 자체 평가 활동 시작 (28) '고등교육개혁' 심포지엄 개최, 연구중심대학 육성, 학부대학 운영, 국립대학 특수 법인화 등 논의 (29)	
	4	'서울대학교교수업적관리·평가에관한규정' 공포 (7)	농민단체와 학생. '반UR' 과 '재협상' 을 요구하며 전국적 시위 (9)
	5	'교육·연구조직 조정위원회' 발족 (20)	
	6		카터 전 미국대통령. 북한핵문제와 관련 북한 방문 위해 내한 (13) UR 국회비준반대 집회 (18)
	7	영국 옥스포드대학과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 (19)	김일성 북한주석 사망. 19일 장례식 (8) 검찰, 학원내 주사파 전원 구속수사 지시 (29)
	9	'전임교수 임용규정 개정안' 확정, 3년 계약제 도입 (8) 뉴질랜드 오클랜드대학과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 (14) 농생대·수의대 관악캠퍼스 이전 계획 확	추석 연휴기간 중 고속도로 하행선 일부구간 버스 전용차선제 실시 (17)

년	월	학 내	사회·교육 일반	
1994	10	정, 농생대 4개 학부 통합 추진 (30)	5·18 묘역 성역화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 확정 (18) 성수대교 붕괴사고 (21) 검찰, 12·12 사태를 신군부가 사전 계획한 군사반란으로 규정한 수사결과 발표 (29)	
		『서울대학교 자체평가 연구보고서』 발간 (13)		
		인제대학교와 학술교류협정 체결 (24)		
		독일 자유베를린대학교와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 (26)		
		규장각 서울정도 600주년 기념 특별전시회 ‘고지도와 고서로 본 서울’ 개최 (10. 26~11. 5)		
		11		‘서울대학교기금교수운영규정(안)’ 확정, 1995학년도부터 기금교수제 도입 시행 (3)
				환경계획연구소 ‘관악캠퍼스 발전관리 기본계획’ 제시 (7)
		12		서울대학교 2000년대 미래상 및 관악캠퍼스발전관리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24)
				자동제어특화연구센터 개소 (15)
		1995		1
	중앙도서관, 학술정보시스템 ‘SOLARS’ 가동 (21)		버스전용전일차로제 실시 (3)	
	2		학장보제도 폐지하고 부학장제 신설 내용 담은 서울대학교설치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1)	
관악캠퍼스주차관리규정 제정 (27)				
3	3월이수성 제20대 총장 취임 (1)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공식 발족, 한국·미국·일본 참여 (9)	
	간호과학연구소 신설 (1)		정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신청서 정식 제출	
4	어학연구소, 영어능력시험(SNUCREPT) 개발 (13)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공식 통합 (31)			
5	‘서울대학교발전위원회’ 및 ‘서울대학교법 제정연구위원회’ 구성 (17)		정부, 4·19 묘역을 국립묘지로 격상 (19) 대구 지하철공사장 도시가스 폭발사고 (28)	
	1998학년도부터 특례 입학 자격 대폭 제한 결정 (4)		정부, 북한 남포공단에 투자하는 대우의 협력사업 승인 (17)	

년   월	학 내	사회·교육 일반
	행정대학원 준공(6)	국공립대 본고사 폐지, 사립대 입시 정원 자율화. 초중고교의 종합생활기록부 도입 등 (31)
6	핀란드 헬싱키대학교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 (15) 자연과학대학, 학부 단위로 신입생 모집 결정 (22)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발생 (29)
7		민선 시·도지사 15명과 시·군·구청장 230명 일제히 취임. '민선 자치시대' 출범 (1)
8	인구및발전문제연구소, 사회발전연구소로 명칭 변경 (24) 학장회, '대학원연구생규정' 및 '환경안전관리규정' 제정 (24) 교수 228명, 5·18 관련자들의 사법처리를 주장하는 성명서 발표 (29)	국민학교 명칭을 초등학교로 변경(11)
9	5·18 학살자 처벌과 특별법 제정' 요구 서울대인 총궐기, 동맹휴업 (29~30)	한국,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국에 선출 (21)
10	학부설치 근거 마련을 위해 학칙 개정 (10)	
11	1996학년도 신입생 선발에서 미등록 인원을 충원하기로 결정 (16) 공학연구소, 생물화학공학연구센터 신설 (23)	한국,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 (8)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권영길) 공식 출범 (11)
12	선우중호 제21대 총장 취임 (18)	노태우 전대통령, 비자금조성 혐의로 구속 (16) 검찰, 전두환 전대통령 구속 (3) 국회, 5·18 특별법과 공소시효 특례법 통과 (19)
1996	1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1997년 농업생명과학대학 이전 확정 (9) 2 기계·기계설계·항공우주공학과 제1공학관 입주 (9) 3 농업생물신소재연구소 신설 (2) 4 5 국제교류센터 설치 (23) 유공게스트하우스 준공 (27)	비날론 개발 월북 화학자 이승기 박사 사망 (8)  한·미 정상회담, 남한·북한·미국·중국 이 참가하는 4자회담 제의 (16) 한·약분쟁 본격화 (16) 2002년 월드컵, 한·일 공동개최 결정 (31)

년	월	학 내	사회·교육 일반	
1996	6	‘사회과학정보센터’ 개관식 (29)		
		정보통신연구소, 정보통신행정관 국제회의 실에 원격 영상강의 시스템 개통 (27)		
	7	미국 워싱턴대학과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 (31)		
	8	관악사 가족생활동 200세대 규모 준공 (28) 천연물과학연구소, ‘전통 동양약물 데이터 베이스(TradiMed DB)’ 완성 (28)	김영삼 대통령, 북한에 대해 4자회담 수용할 경우 식량난 해결을 위한 근본적 원조 제 의 (15) 검찰, 한총련 주최로 연세대에서 개최된 범 민족 대회 관련 465명 구속 (15~20) 12·12 및 5·18 사건 재판에서 전두환, 노 태우 전대통령 각각 사형과 징역 22년 6 월 선고 (26)	
	9	기금교수 운영 규정 제정 (4) 공대 신공학관 제1호동 준공식 (20)	강릉 앞바다에 북한 잠수함과 무장공비 침 투 (18)	
	10	개교 50주년 기념행사 (7~27) 『서울대학교 50년사』(편찬위원장 한영우 교수) 발간 (15) 6·25 참전 전사자 17명에 명예졸업장 수 여 (15) 박물관, 교서관련 특별전 ‘서울대학교 반세 기전’ 개최 (10.15~12.31)	김구 암살범 안두희 피살 (23)	
	11		구 총독부 건물 완전 철거 (13) 월북 사학자 김석형 사망 (26)	
	12	미국 미네소타대학과 국제학술교류협정 체 결 (2) 초미세소자기술연구소 및 화학공정신기술 연구소 신설 (4) 근대법학교육 백주년 기념관 개관 (18) 일본 도쿄외국어대학과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 (30)	한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12) 정리해고 인정한 노동법 개정안 기습처리로 노동계 총파업 (26)	
	1997	1	한국외국어대학교와 학술교류 협정 체결 (17) 군산대학교와 학술교류 협정 체결 (23) 지역중합연구소를 국제지역원으로 변경 개 원 (24)	한보그룹 부도 (23)

년	월	학 내	사회·교육 일반
		일본 리츠메이칸대학교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 (24)	
2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대학교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 (3) 수의과대학 애완동물전용 부속병원 개원 (17) 국립대학 간의 학술교류 협정 체결(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24) 가정대학을 생활과학대학으로 명칭 변경 (27) 교육종합연구원, 환경계획연구소 신설 (27) 과학교육연구소 폐지 (27)	복제양 돌리 탄생 발표 (23)
3		동원생활관 운영 (3) 교무처, 개교 이래 가정형편이나 질병 등으로 퇴학·제적된 1만여 명의 학생들 재입학 허용 (5)	
4			대법원, 전두환 무기징역, 노태우 징역 17년 확정 (17)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 망명 (20)
5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가정학과 폐지, 생활과학대학 각 학과로 소속변경 (30) 법과대학, 공과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각 학과를 학부로 변경 (30) 사회과학대학 신문학과를 언론정보학과로 변경 (31) 지진공학연구센터 및 수중음향특화연구센터 신설 (31)	
6		녹원사와 상록사를 상록사로 통합 (20)	금융감독원 신설 (16)
7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SOLARSnet 가동 (1)	홍콩 주권, 중국에 귀속 (1) 울산, 광역시로 승격 (15)
8			KAL기 관추락 229명 사망 (6) 북한 경수로 공사 착공 (19)
9		인지과학연구소, 인문정보연구소 신설 (13)	
10		일본 홋카이도대학(1), 영국 셰필드대학(6), 멕시코 과달라하라대학(27)과 국제학술	



년	월	학 내	사회·교육 일반
		교류협정 체결 국제백신연구소 설립 (9)	
	11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학교와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 (19)	한나라당 창당 (21)
	12	1998학년도부터 미술대학 산업디자인과와 공예과가 디자인학부로, 공과대학 화학공학과와 공업화학과가 응용화학부로, 생활과학대의 소비자·아동가족학과군이 소비자·아동가족학부로 전환 결정 (1) 독일 본대학교와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 (4)	정부, 외환위기로 IMF와 긴급자금지원 합의 (3) 제15대 대통령 선거, 김대중 대통령 당선 (18) 전두환, 노태우 사면 복권 (20)
1998	1	서울대학교 종합정보화기본계획 확정 발표 (31)	
	2	교수윤리위원회 발족 (19)	다보스 세계경제 포럼 (1. 29~2. 3)
	3	발전자문위원회, '서울대학교 장기발전구상' 발표 (12) 캐나다 시몬프레이저대학교와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 (24)	
	4	신규교수 공채제도 개선방안 발표 싱가폴 국립대학교와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 (8)	
	5	임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서총련' 불신임 의결, 총학생회 사실상 한총련 탈퇴 (20)	
	6	프랑스 소르본대학(10), 대만 국립대만대학교(24), 태국 출라롱콘대학교(25), 일본 와세다대학교(25)와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	북한 잠수정 동해에서 어선 그물에 걸려 좌초 (22)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98 발매 (25)
	7	일본 도호쿠대학교와 학술교류협정 체결 (8)	초조 고려대장경 대반야바라밀다경 인쇄 두루마리 발견 (8)
	8	캠퍼스 이용 규범 제정 실시 (1) 연구중심대학으로 도약을 위한 서울대학교 개혁안 발표 (3) 학사성적 엄정화방안 발표 (25)	
	9	선우중호 총장, 자녀 고액과외 문제로 사퇴 (1) 학부 중심으로 모집단위를 설정하는 내용	

년	월	학 내	사회·교육 일반
10		을 담은 학칙 개정 (2)	
		재임용 탈락한 미대 김민수 교수 행정심판 청구 (9)	일본 대중문화 1차 개방 발표 (20)
		상산수리과학관 개관 (9) 서울대학교 상징조형물 제막 (14) 규장각, 조선왕조실록 세계기록유산 등록 기념 특별전시회 (10.21-31)	
11		캠퍼스 종합정보시스템 '정보광장' 서비스 제공 (2)	금강산 관광 유람선 첫 출항 (18)
12		이기준 제22대 총장 취임 (24)	
		서울대-디지털조선일보, TEPS(영어능력평가시험) 독점시행 계약 (4)	교원정년 62세 법안 통과 (30)
1999	1	서울대 대표 영문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 영어능력검정시험 TEPS 정식 시행 (31)	유로체제 출범 (1) 한일어업협정 발효 (22)
	2	서울대학교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운영 개시 (8)	
	3	기창덕 박사, 의학사 관련도서 5천권 기증 의과대학, 의학교 설립 1백주년 기념행사 (24)	대인지뢰 금지협약 발효 (1) 교육부, 특별회계제도 도입을 포함한 교육 발전 5개년 계획시안 발표 (11) 서울시, 버스 토큰 판매 금지 (19) 유럽, 광우병 파동 (2)
	4	서울대병원 의학박물관 개관 (2)	CIH바이러스로 사상 최악 컴퓨터 대란 (26)
	5	규장각 승정원일기 국보 303호로 지정(6) 대학기록관리실 개관(12) 학사관리 엄정화방안 철폐 요구하며 학생들 본부 학생과 점거 (31)	1억 년 전 공룡알 화석, 보성서 무더기 발견 (25)
	6	종합정보화 5개년 기본계획 1단계 사업으로 종합행정정보시스템 개통 (4) 중앙도서관 전자정보실 준공과 함께 전자도서관시스템 가동 (24)	한국전 이후 남북해군 서해에서 처음으로 교전 (15) 씨랜드 수련원 화재로 유치원생 19명 사망 (30)
	7	두뇌한국21(BK21) 사업신청서 교육부에 제출, 과학기술 분야 12개, 특화 분야 1개, 핵심 분야 24개 사업팀 선정 (20)	
	8	교육부, 두뇌한국21 사업 최종 선정결과 발표 - 본교 과학기술 분야 12개 사업단, 핵심 분야 18개 사업팀 선정 (31)	남북한 노동자 축구대회 평양서 첫 경기 (12)

년	월	학 내	사회·교육 일반
	9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1만인 서명운동, 8천7백여 명 서명 (13~16) 공대 실험실 폭발사고, 대학원생 3명 사망 (18)	교육부, 두뇌한국21(BK21) 사업 시작
	10	두뇌한국21사업단에 대한 규정 제정 (26)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출범 (2)
	11	학술정보원 설치 (24)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 시애틀서 개막, 대규모 반세계화시위(30)
	12	1984년 총학생회 부활 이후 최초로 비운동권 총학생회장 당선 (3) 미국 워싱턴주립대학교와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 (31)	
2000	1	빌 게이츠 재단, 국제백신연구소에 4천만 달러 연구비 지원 정덕균 전기공학부 교수, 반도체공동연구소에 100만 달러 기부 (1) 이집트 카이로대학교와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 (18)	총선시민연대 공천반대인사 66명 발표, 낙선운동 본격화 (24)
	2	공과대학 컴퓨터공학과를 컴퓨터공학부로 변경 (3) '전임교수및조교임용규정' 개정 (3)	한국 뇌사 공식 인정 (9)
	4	서울대 시설관리 노동조합 전면 파업 (19)	
	5	독일 훔볼트대학(12),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29), 미국 미주리대학(29)과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	
	6	서울대와 도쿄대, 교류 및 협력에 대한 공동선언문 발표 (7) 한국정신문화연구원과 학술교류협정 체결 (9) 생활복지조합, 생활협동조합으로 전환 (15) 서울대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발표 (30)	김대중 대통령 평양방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 (13) 남북 정상 615선언 발표 (15) 의료계, 의약분업 강행 반대 1차 총폐업 (20) 국회, 이한동 총리서리 상대 사상 첫 인사청문회 (26)
	7	중앙도서관 휴대폰 서비스 제공 (1)	전국 144개 시·군지역번호를 16개로 통합 (2)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 국무회의서 의결 (4) 교육부, 국립대학발전계획안 발표 (26)

년	월	학 내	사회·교육 일반
	8	해군사관학교와 학술교류협정 체결 (18) 공과대학 '비전 2000' 행사 및 엔지니어하 우스 개관 (31)	의약분업 시행 (1) 남북 이산가족 50년 만에 첫 상봉 (15~18)
	9	두레문예관 개관 및 학생지원센터 신설 (8)	
		일본 게이오대학교와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 (5)	
	10	일본 오사카대학교와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 (20)	
		연세대학교와 학술교류협정 체결 (25)	
		의과대학·약학대학 학생들, 의약분업 정 책 반대 수업 거부	
		서울대에서 사상 첫 국정감사 실시 (30)	
	11	주차관제시스템 전면 시행 (1)	
		아시아·태평양 교육발전연구단 국제학술 대회 (11. 9~10), 본교, 베이징대·도쿄 대·하노이대 학술교류협력, 공동문화 창설을 위한 공동선언 발표.	
	12	미국 피츠버그대학교와 국제학술교류협정 체 결 (6)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10)
		석사박사통합과정운영 규정 제정 (11)	
		성희롱·성폭력 상담소 개설 (22)	
2001	2	포스코 생활체육관 준공 (1)	계남지도 완성 공식 발표 (12) 32년 만의 폭설로 서울-중부지역 마비 (15)
	3	교수학습개발센터(CTL) 신설 (8)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 사망 (21)
		2001년부터 대학원 후기모집 실시 확정 (22)	인천국제공항 개항 (29)
		국내 최대 규모 학술연구용 슈퍼컴 가동 (26)	
	4		전국교수노동조합준비위원회 발기인대회 및 출범식 (14)
	5	캠퍼스전산망 무선랜 서비스 실시 (1)	
		규장각 고문서 디지털화 작업 완료, 정식 가 동 (15)	
		기록관 신설 (24)	
		방사선연구센터 개관 (29)	
	7	입학관리본부, 대외협력본부 신설 (6)	

년	월	학 내	사회·교육 일반
		프랑스 생떼지엔 에콜데민과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 (12)	
		여름 농민학생연대활동 기간 중 농민회와 성폭력 논란	
8		일본 규슈대학교와 학술교류협정체결 (21) 서울대학교 학칙 개정. 입학처를 입학관리본부로, 대외교류처를 대외협력본부로, 처·실·국을 교무처, 학생처, 연구처, 기획실, 사무국, 시설관리국 6개로 줄이고, 과를 16개로 줄여 학적과 수업과를 학사과로, 장학과, 후생과를 복지과로, 연구지원과, 연구진흥과를 연구지원과로, 경리과, 관재과를 재무과로 변경 (31)	국제통화기금에 지원금 모두 상환 (23)
9		대학생활문화원 개원 (1) 육군사관학교와 학술교류협정 체결 (19) 멀티미디어 강의동 신축공사 및 기공식 (27)	미국 9·11 테러 발생 (11)
10		독일 루트비히막시밀리안대학교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 (8) 교수협의회, 교육부의 국립대학발전계획안에 반대입장 발표 (8) 학생징계절차 등에 관한 규정, 캠퍼스 이용 규정 제정(30)	미국, 아프가니스탄 군사거점 공격 (7)
11		서울대 장기발전계획(2002~2011) 시안 발표 (6) 전국교수노동조합 서울대에서 출범, 서울대 교수 35명 참여 (10)	
		일본 쇼난공과대학교와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 (27)	
12		해외자문단 블루리본패널 보고서 발표 (17)	
2002	1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 (5)	
	2	인문학연구원, 여성연구소, 사회발전연구소, 농업생명과학연구원 신설 (26)	
	3	개교 이래 처음으로 성적불량으로 인한 학사제적자 발생 (19) 총학생회, 본부 불신임안 가결하고 총장실	

년	월	학 내	사회·교육 일반
		점거 (25)	
4		생활협동조합 사업 개시 (1) 관악사 노조, 전면 파업 돌입 (18) 4·19기념탑 두레문예관 앞 동산으로 이전 (19)	고속철도 KTX 운행 시작 (12) 노무현, 당내 경선을 통해 민주당 대통령후보로 확정 (27)
5		사외이사 겸직 등 문제로 이기준 총장 조기 퇴진 (2) 총장실 점거로 총학생회장 제명 처리, 학생들 징계 철회 요구 (16) 사범대, 서울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설립 계획안 발표(16) 호주 멜버른대학교와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 (17)	2002년 한일월드컵 개막 (31)
6		교무처 소관 부속시설로 기초교육원 신설 (7) 중국 복단대학(10),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16), 중국 상하이 교통대학(18)과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 서울대 캠퍼스 부문 장기계획 발표 (24)	미장갑차에 치여 여중생 2명 사망 (13) 월드컵 거리응원 열풍, 한국은 월드컵 4위로 마감 (29)
7		정운찬 제23대 총장 취임 (20)	
8		정보화 포털 사이트 서비스 시작 (6)	
9		경영대학, 국내 최초로 세계경영대학협회(AACSB) 인증 획득 (11) 총장실 점거로 징계받은 학생회간부 징계 해제 (26)	경의선·동해선 철도 연결을 위한 착공식 (18)
10		서울대인 총회에서 '총장과의 대화' 진행 (14) 몽골 국립대학교와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 (24)	약대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6년제로 전환 (18)
11		관악사 노조 205일만에 업무 복귀 (9)	장갑차사건 미군 피의자 무죄 평결, 촛불 시위 전개 (22) 북한, 금강산 관광특구 지정 (25)
12		e-비즈니스 연구센터 개소 (9) 중앙교육연구전산소 리눅스 허브 센터 개통식 (10)	로또복권 발매 시작 (2) 제16대 대통령 선거, 노무현 후보, 대통령 당선 (19)

년	월	학 내	사회·교육 일반
2003	1	미술관 신설 (1)	
	2	수의과대학 관악캠퍼스로 이전 (12) 교수학습개발센터, 글쓰기 교실 운영 (17) 역사연구소 신설 (25)	서울시, 청계천 복원 기본 계획 발표 (11) 김대중 대통령, 대북비밀송금 의혹관련 대 국민사과발표 (14) 대구 지하철 방화 192명 사망 (18) 군복무 기간 2개월 단축 (15) 미국·영국, 유엔 안보리 동의 없이 이라크 공격 결정 (17)
	3	생명공학공동연구원 신설 국제대학원 신설 (1) 서울대병원, 성희롱 의대교수 징계 (4) 서울대학교 환경 안전 관리 규정 개정 (25)	
	4	이라크 전쟁 중단과 한국군 파병 반대를 위 한 서울대인 동맹휴업 (2) 2005년부터 지역균형 선발전형 도입 확정 (4)	한국, 논란 속에 이라크 파병 선발대 출국 (17)
	5	김민수 전 교수 복직을 위해 서울대 교수들 릴레이 시위 (2) 전임교수 정년보장 임용에 대한 시행 세칙 발표 (9) 중앙도서관 전자도서관 가동식 (21)	
	6	중앙전산원 명칭 변경 등 학칙 개정 (11) 인문학연구원에 한국문학연구소, 중국어문 학연구소, 문화유산연구소, 언어연구소 신설 (11) 농업생명과학연구원에 농생명과학정보연 구소 신설 (11)	
	7		부안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유치 신청, 격렬 한 주민 반대운동 전개 (24)
	8		대북 송금 문제로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 투 신자살 (4)
	9	국내 대학 최초로 전 교직원과 학생에게 성 희롱 예방교육 실시 (8) 농업생명과학대학 관악캠퍼스 이전 (23)	
	10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한 주택거래신 고제 도입 (29)
	11	평의원회 의결기구화 (1) 총장 공관 철거하고, 그 자리에 교수아파트 건립하기로 결정 (5)	송두율 독일 뮌스터대학 교수, 국가보안법 으로 구속기소 (19)

년	월	학 내	사회·교육 일반
	12	2004년도부터 교양교과목 상대평가제 시행 결정 (20) 캐나다 알베르타대학교와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 (20)	정부, 이라크파병안 확정 (17)
2004	1	태국 스리파툼대학교와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 (7) 정운찬 총장, 동남아 4개국 5개 대학 방문 및 교류협정 체결 (1. 25~1. 31) (인도네시아 국립대학, 말레이시아 말라야대학, 태국 타마사트대학, 베트남 하노이대학, 베트남 호치민대학)	
	2	국제학연구소 신설, 초미세소자기술연구소 폐지 (24)	황우석, 세계 최초 인간배아 줄기세포 배양 성공 발표 (13)
	3	예술계 분야음악대학, 미술대학,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설치 (1) 스페인 바르셀로나 오토노마대학 (4), 미국 밴더빌트대학 (19), 미국 예일대학 (31) 과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	국회, 헌정사상 최초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탄핵반대운동 본격화 (12)
	4	산학협력재단 발족 (27) 황우석 교수,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인상 수상 (28)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공식 발효 (1) 북한 용천역 폭발 대참사 (22)
	5	서울대-공군사관학교 학술교류협정 체결 (3) 중국 중앙민족대학교와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 (11) 고 김진균 명예교수 소장 자료와 도서 기록관에 기증 (27)	헌법재판소,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 기각 판결 (14)
	6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와 특별학생교환협정 체결 (24) 멕시코 ITSEM(17) 칠레 칠레대학교(25)와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	이라크 무장단체에 피랍된 김선일씨 피살 (22)
	7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교와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 (14) 신 전자문서시스템 가동 (16) 농활대 성폭력사건으로 인한 철수 둘러싸고 논란 확산	



년	월	학 내	사회·교육 일반
	8	기초교육원 독립기구로 전환	
	9	2005년부터 '신입생 세미나' 강좌 개설하 기로 확정 (22) 100번째 서울대 명예박사 수여 (23) 러시아 극동국립대학과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 (21)	성매매특별법 시행 (23)
	10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로스쿨 도입 확정 (5) 헌법재판소, 수도권이전법 위헌 판결 (21)
	11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일본연구소 신설 (19) 정화(국문과), 개교 이래 첫 여성 총학생회 장 당선 (30)	대입 수능에서 휴대전화 부정사건 발생 (19)
	12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개교 이래 처음으 로 탈북자 합격 (3) 캐나다 토론토대학과 국제학술교류협정 체 결 (27)	북한 개성공단 첫 제품 생산 (15)
2005	1	실험동물자원관리원 신설 (13) 덴마크, 덴마크공과대학(27), 네덜란드 레 이덴대학(28)과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	
	2	홍콩, 홍콩중문대학(4), 홍콩대학(15)과 국 제학술교류협정 체결	현재, 호주제 헌법불합치 결정 (3)
	3	치의학대학원 신설 (1) 인사위원회, 김민수 전 서울대 교수 재임용 결정 (3) 신입생 적응을 위한 캠퍼스 멘토링 프로그 램 실시 (17) 학생비상총회, 본부 진입 도중 청원경찰 부 상 물의 (31)	
	4	오스트리아 비엔나대학 (6), 뉴질랜드 빅토 리아대학 (12)과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 규장각 증축 (22)	
	5	중국 인민대학교와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 (9) 황우석 교수팀, 배아줄기세포 복제 성공 발 표 (20)	내신등급제 반대하는 고교생 촛불 시위 (7)
	6		6·15 남북공동선언 5주년 기념 민족통일대

년	월	학 내	사회·교육 일반
			축전 평양 개최 (14) 연천군 부대 내무반, 총기난사사건 발생 (19)
7		미국 라이스대학(4), 미국 노던아이오와대학(19), 필리핀 아테네오대학(22), 영국 맨체스터대학(25)과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 공과대학 교수, 연구비 유용혐의로 구속 (30)	교육부, 내년부터 국립대 법인화 추진한다고 발표, 국공립대 반발 (1) 북한 6자회담 복귀 선언 (9) 국가정보원 도청 파일 보도 (21)
8		황우석 교수팀, 세계 최초로 개 복제 성공 (3)	정부, 8·31 부동산 대책 발표 (31)
9		필리핀 산토토마스대학(2), 오스트리아 요하네스케플러대학(23)과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	북한 핵 관련 6자회담 타결, 북한 핵계획 포기 (19)
10		프랑스 에콜폴리테크니크(13), 대만 국립성공대학(18), 필리핀 달리만대학(24), 스웨덴 음살라대학(24)과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 서울대병원에 세계줄기세포허브 개소 (19) '걷고 싶은 거리' 1단계 구간 개통 (25) 서울대, 영국 더 타임즈 조사 세계 100대 대학 선정 (27)	청계천 복원공사 완공, 개통 (1) 쌀협상 비준안 국회 통과 (27)
11		영국 시티대학교 (3),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대학 (8), 독일 다름슈타트공과대학 (18)과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 이륜자동차 등록제 실시 (21)	황우석 교수팀 논문 조작 파문 본격화 (12) 제13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부산에서 개최 (18, 19)
12		일본 아오야마가쿠인대학 (7), 몽골 과학기술대학 (7), 미국 오클라호대학 (22)과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 공과대학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개소 (14) 황우석 교수팀의 논문 검증을 위한 서울대 조사위원회 구성 (16) 연습림을 학술림으로 명칭 변경 (27)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통과, 찬반 논란 (9) 홍콩에서 열린 WTO 각료회의에서 한국농민 대규모 시위 (13~17)
2006	1	브라질 상파울루대학 (9), 미국 텍사스주립대학 (24), 프랑스 고등정치학교 (30), 미국 프린스턴대학 (31)과 국제학술교류협	

년	월	학 내	사회·교육 일반
		정 체결	
2		규장각과 한국문화연구소 통합, 규장각한 국학연구원 설립 (1) 교육부와 학생들이 저소득층 초중고생 후 견인 역할맡는 '대학생 멘토링 사업' 체 결 (8) 일본 나고야대학 (28), 카자흐스탄 국립사 범대학 (28)과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	
3		중국 사회과학원과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 국제학술교류협정 100개 대학 돌파 (8) 논문 조작 사건 황우석 교수 관련 징계 확 정, 황우석 교수 파면 (21) 서울대학교 교수윤리헌장 제정 및 발표 (15) 총장선거 직선제 유지, 직원 참여 (22) 체코 프라하경제대학교와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 (27)	평택 미군기지부지 강제수용에 주민 반발로 시위 (5) 대법원, 새만금 공사 계속 판결로 공사 재개 (17) 한명숙, 헌정 사상 첫 여성 총리 임명 (19)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 관련 특혜, 부정 시 비 논란 (23)
4		공대, 여성등문 1천명 기념 홈커밍 행사 (28)	
5		미국 조지메이슨대학(1), 그리스 The National & Kapodistrian University of Athens (2)와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 경영대학, 경영전문대학원 개설 일정 및 운 영 계획 발표 (8) 통일연구소 개소 (18) 도쿄대학 소장 '조선왕조실록 오대산본' 서 술대에 반환 발표 (30)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피소 (22)
6		서울대 미술관 개관 (8) 황라열 총학생회장, 경력 위조 논란으로 탄 핵 (12) 홍콩, 홍콩시티대학교와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 (26)	한미 FTA 본협상 미국에서 시작 (5) 대법원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 정정 요청 허가 (22)
7		미국 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학교와 국제학술 교류협정 체결 (7) 외국인학생을 위한 CJ 인터내셔널센터 개 관 (10) 조선왕조실록 오대산본 47권 규장각에서 공식 인도 인수 (14)	북한, 미사일 6기 발사로 국제적 긴장 (5)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FTA 협상에 대규모 반대 시위 (10) 학교 급식에서 사상 최대 규모 집단 식중독 사고 발생 (23)

년	월	학 내	사회·교육 일반
	8	이장무 제24대 총장 취임 (20) 개교 60주년을 맞아 서울대학교 UI 재정립 (2) 서울대 개교 60주년 기념 도서전시회 (8)	

## 참고문헌

### 제1부 공간

#### 공통

『서울대학교 20년사』, 1966년.

『서울대학교 30년사』, 1976년.

『서울대학교 40년사』, 1986년.

『서울대학교 50년사』, 1996년.

『서울대학교 요람』

『서울대학교 백서』(구 『대학백서』)

『서울대학교 통계연보』

『서울대소식』

『대학신문』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디지털 콘텐츠 홈페이지(<http://library.snu.ac.kr>)

#### 제1장 캠퍼스의 변천

서울대학교 시설관리국, 『시설편람』

대한민국 문교부 주한미국경제협조처, 『한국국립고등교육기관 실태조사보고서』, 1960년.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실태조사보고서』, 1962년.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의 개요』, 1966년.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의 개요』, 1967년.

- 서울대학교, 『종합10개년계획개요』, 1967년.
- 공간사, 『공간』, 1967년 2월호.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부선응용화학연구소, 『서울대학교 종합캠퍼스 계획수립보고서』, 1970년.
- 서울대학교 기획위원회 교육연구 및 기구조직분과위원회, 『서울대학교 기획위원회 교육연구 및 기구조직분과위원회 제1차 (중간)보고서』, 1970년 7월.
- 서울대학교 기획위원회 교육연구 및 기획조직분과위원회, 『서울대학교 기획위원회 교육연구 및 기구조직분과위원회 제1차 (중간)보고서』, 1970년 10월.
- 서울대학교 기획위원회, 『교육연구 및 기구조직에 관한 연구보고서』, 1971년 12월.
- 서울대학교 건설본부, 『서울대학교 종합캠퍼스 마스터플랜 보고서』, 1972년.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부설 응용화학연구소, 『서울대학교 종합캠퍼스 기본설계 건축보고서』, 1972년 9월.
- 서울대학교 건설본부, 『서울대학교 종합캠퍼스 시설핸드북』, 1975년.
- 서울대학교 건설본부, 『서울대학교 캠퍼스 종합조경계획』, 1975년.
- 유병림 · 양병이 · 김기호, 『서울대학교 종합캠퍼스 시설장기발전계획』, 1980년.
- 서울대학교 기획실, 『제3차 대학발전 심포지움 대학원과정 교육의 강화방안/캠퍼스 및 시설의 합리화방안』, 1986년 2월.
-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발전장기계획 캠퍼스부분계획: 1987~2001』, 1987년 4월.
- 서울대학교 농학캠퍼스 건설추진위원회, 『농·수의학 캠퍼스 이전사업계획서』, 1989년 6월.
- 이영한, 「한국고등교육시설에 있어서 공산유형의 변천과정과 특성에 관한 연구」, 1991년 2월.
-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시설확충 종합계획』, 1992년.
-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연구공원 종합계획』, 1994년.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부설환경계획연구소, 『관악캠퍼스 발전관리 기본계획-중간보고서-』, 1994년 2월.
-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발전관리 기본계획』, 1994년 7월.
-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 발전관리 기본계획』, 1996년 9월.
- 서울대학교, 『BK21 관련 캠퍼스 인프라 시설계획에 대한 연구』, 1999년 12월.
- 캠퍼스발전계획위원회, 『서울대학교 캠퍼스부문장기계획-중간보고-』, 2001년 9월.
-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캠퍼스부문 장기계획: 2002~2006』, 2001년 12월.
- 김석철, 「서울대 마스터플랜」, 『여의도에서 새만금으로』, 생각의나무, 2003년.
-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재건축 및 조경 마스터플랜에 관한 연구』, 2004년.
-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걷고 싶은 거리’ (가칭) 조성사업의 기초조사 및 추진방식 결정연구』, 2004년 12월.

김경수, 「전통건축의 이론화와 현대화」, 『한국건축사연구』 2.

## 제2장 대학의 심장, 도서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도서관보』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도서관소식』

Dober Paddock Upton and Associates Inc, 『Library: Program & Design National University』, 1972년.

서울대학교 도서관, 『서울대학교 도서관 장기발전계획에 관한 연구(1990~2001)』, 1990년 2월.

박병호, 「우리나라 고문서자료의 수집·조정」, 『오산유동렬선생정년기념 도서관논집』, 도서관논집간행위원회, 1992년.

이만갑, 「70년대의 서울대 도서관」, 『오산유동렬선생정년기념 도서관논집』, 도서관논집간행위원회, 1992년.

안영배, 「서울대도서관-교육투자빈곤의 현장」, 『신동아』, 1992년 5월호.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서울대학교 도서관오십년사(1946~1996)』, 1996년.

백린, 『한국도서관사연구』, 한국도서관협회, 1996년.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전자도서관의 설계에 관한 연구』, 1996년 12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정보화 현황』, 2003년 12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서울대학교 도서관 장기발전계획(2005~2014)』, 2005년 2월.

## 제3장 정보화

서울대학교 학술정보원, 『정보화백서』

서울대학교 정보화추진단, 『정보화자료집』, 1997년.

서울대학교 중앙교육연구전산원, 『캠퍼스전산망 발전계획』, 2000년 3월.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전자도서관 디지털 콘텐츠 구축을 위한 표준화 연구』, 2002년.

서울대학교 정보화본부, 『서울대학교 정보화종합발전계획』, 2003년 12월.

서울대학교 정보화본부, 『2006학년도 종합정보화 시행계획』, 2006년.

## 제2부 운영

### 공통

『서울대학교 20년사』, 1966년.

『서울대학교 30년사』, 1976년.

『서울대학교 40년사』, 1986년.

『서울대학교 50년사』, 1996년.

『서울대학교 요람』

『서울대학교 백서』(구 『대학백서』)

『서울대학교 통계연보』

『서울대소식』

『대학신문』

『교무편람』

제장 운영 체제의 변화와 기구 개편

『교수신문』 홈페이지(<http://www.kyosu.net>)

『프레스시안』 홈페이지(<http://www.pressian.com>)

『민중의 소리』 홈페이지(<http://www.voiceofpeople.org>)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홈페이지(<http://www.koreanhistory.or.kr>)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history.go.kr>)

서울대학교 홈페이지(<http://www.snu.ac.kr>).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장리욱, 『나의 회고록』, 샘터, 1975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창회, 『서울법대 100년사 자료집(제2집: 1945~1987)』, 1989년 5월.

서울대학교 기획실, 『일반행정직 인력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994년 5월.

최송화 외, 『학칙의 법적 성격 및 체제에 관한 연구』, 1995년 8월.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법 제정에 관한 연구 - 서울대학교설치법, 서울대학교특별회계법- 최  
중보고서』, 1996년 2월 28일.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법 수정(안)』, 1997년 8월 20일.

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 『서울대학교 발전을 위한 설문조사 보고서』, 2001년 3월.

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 『국립대학 발전계획안 '대토론회'』, 2001 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 심포  
지움, 2001년 10월 30일 발행.

강명숙, 『미군정기 고등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2002년.

전국국·공립대학교 교수협의회·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 『국립대학운영에관한특별법(안)에 대  
한 검토 의견』, 2002년.



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 『국립대학운영에관한특별법(안) 검토 및 서울대학교 운영체제 개선 대토론회』, 2002 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 심포지움, 2003년 2월 3일 발행.

서울대학교 운영체제개선 연구팀, 『서울대학교 운영체제 개선 연구 결과보고서』, 2003년 4월.

국회좋은교육연구회·국회의원 이주호, 『국립대학 발전을 위한 법제화 방안 - 국립대학법인화 및 대학회계제도 도입 검토-』, 2005년 7월.

서울대학교, 『2005학년도 제2차 신규임용교원워크숍』, 2005년 8월 30일.

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 『국립대학 법인화, 무엇이 문제인가?』, 2005년 9월 28일.

서울대학교 민주화교수협의회, 『새 총장에게 바란다 - 서울대 발전을 위한 당면과제』, 2006년 4월 20일.

## 제2장 대학 발전 계획의 수립과 추진

대한민국 문교부 주한미국경제원조처, 『한국국립고등교육기관 실태조사보고서』, 1960년 5월.

서울대학교 기획위원회 교육연구 및 기구조직분과위원회, 『서울대학교 기획위원회 교육연구 및 기구조직분과위원회 제1차 보고서』, 1970년 7월.

서울대학교 대학원·학원자유수호위원회, 『대학개혁의 기본방향』, 1971년 9월.

서울대학교 기획위원회, 『교육연구 및 기구조직에 관한 연구보고서』, 1971년 12월.

서울대학교 기획위원회, 『서울대학교 발전10개년계획의 이념과 목표』, 1977년 12월.

문교부, 『80년대의 한국교육개혁-교육행정백서』, 1983년.

서울대학교 기획위원회 발전계획수립전문위원회, 『서울대학교 발전10개년계획(연구보고서)』, 1983년 12월.

교육개혁심의회, 『고등교육의 개혁방향과 전략』, 1986년 10월.

교육개혁심의회, 『제2차 교육개혁종합보고서』, 1987년 2월.

교육개혁심의회, 『교육개혁종합구상-개요-』, 1987년 12월.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발전장기계획(1987-2001)』, 1987년.

서울대학교 발전장기계획 수정연구소위원회, 『서울대학교 발전장기계획에 대한 평가와 제언』, 1990년 3월.

교육정책자문회의, 『(제1차 종합보고서) 교육발전의 기본구상』, 1991년 2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서울대학교 종합평가 보고서』, 1994년.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2000년대 미래상』, 1995년 1월.

교육개혁위원회, 『한국교육개혁백서』, 1998년 1월.

서울대학교 발전자문위원회, 『서울대학교 장기발전구상』, 1998년 2월.

교육부, 『국립대학발전계획』, 2000년 12월.

- 서울대학교 발전지표연구팀, 『대학 발전지표 수립 및 재정확보 방안 연구』, 2001년 9월.
- 서울대학교, 『세계적 연구중심대학의 창조: 서울대학교 사례연구 - 교육개선포널의 조사결과 및 권고사항』, 2001년 12월 17일.
- 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 『“Blue Ribbon Panel” 보고서에 대한 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의 견해 및 성명서』, 2002년.
-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장기발전계획(2002~2011)』, 2003년.

### 제3장 교수 사회의 변천

『경향신문』, 『문화일보』, 『서울신문』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디지털 콘텐츠 홈페이지(<http://library.snu.ac.kr>)

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 『「학문후속세대」 육성을 위한 발표 및 토론회』, 1992년 10월 9일.

백충현 외, 『대학교원 인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993년.

오세정 외, 『교수업적관리 평가 및 지원체제강화방안에 대한 연구』, 1993년 8월.

강신택 외, 『계약제교수제도에 관한 연구』, 1994년 6월.

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 『서울대학교 예산문제 공개좌담회』, 1994년 6월 1일.

서울대학교, 『정년보장제도 실시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1995년.

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 『학문후속세대 지원 방안』, 1995년 9월 26일.

서울대학교 교수민주화운동50년사 발간위원회, 『서울대학교 교수민주화운동 50년사』, 1997년 6월.

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 『서울대학교의 현실: 무엇이 문제인가?』, 1999년 11월.

김신복, 『교수 계약제임용 및 연봉제 실시방안』, 1999년 11월.

서울대학교 여교수회, 『여교수회 10년사: 1989~1999』, 2000년.

서울대학교 교수연봉제 연구위원회, 『서울대학교 교수연봉제 도입방안』, 2000년 10월.

서울대학교 공학연구소 부속 공학교육연구센터, 『공학계 교수의 교육업적 평가에 관한 연구』, 2001년 2월 28일.

서울대학교, 『인문학 분야 교수의 연구업적 평가에 관한 연구』, 2001년 3월.

서울대학교 종합평가분석 및 발전 연구위원회, 『2000~2001년 교수업적 종합평가분석 및 발전에 관한 연구』, 2001년 11월.

서울대학교, 『교원인사관리지침 개선에 관한 연구보고서』, 2002년 2월.

서울대학교 운영체제개선 연구팀, 『서울대학교 운영체제 개선 연구 결과보고서』, 2003년 4월.

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 『책임교수시간 연구보고서』, 2004년.

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 『서울대학교 교수 처우 현실화 방안』, 2004년.

- 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 『한국사회에서 서울대학교는 무엇인가?』, 2003 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 대토론회, 2004년 2월 3일 발행.
- 서울대학교 교무처, 『비전임교수제도 개선 연구 최종보고서』, 2004년 7월.
- 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가?』, 2004 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 대토론회, 2004년 11월 22일 발행.
- 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 『세계 속의 서울대학교: 국제적 평가에 대한 우리의 견해』, 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 심포지움, 2005년 2월 2일 발행.
- 서울대학교 민주화교수협의회, 『새 총장에게 바란다 - 서울대 발전을 위한 당면과제』, 2006년 4월 20일.

### 제3부 교육

#### 공통

- 『서울대학교 20년사』, 1966년.
- 『서울대학교 30년사』, 1976년.
- 『서울대학교 40년사』, 1986년.
- 『서울대학교 50년사』, 1996년.
- 『서울대학교 요람』
- 『서울대학교 백서』(구 『대학백서』)
- 『서울대학교 통계연보』
- 『서울대소식』
- 『교무편람』
- 『대학신문』
- 『학사운영협의회자료』
-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 『대학교육』(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발행)
-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 대학교육협의회 홈페이지(<http://www.kcue.or.kr>)
- 서울대학교 홈페이지(<http://www.snu.ac.kr>)
-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디지털 콘텐츠 홈페이지(<http://library.snu.ac.kr>)

## 제1장 입시 제도의 변화

서울대학교, 『모집안내』(구 『모집요강』)

문교부, 『대학입시제도연구-’86학년도 대학입시논술고사분석 및 개선방안-』, 1986년 8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 고등교육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연구』, 1988년.

윤정일 외, 『한국의 교육정책』, 교육과학사, 1991년.

김신일 외, 『시민의 교육학』, 한길사, 1995년.

문리과대학 동문 동송회, 『동송회록』, 1997년.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 교육행정연수원 · 교육학과, 『2002학년도 새 대학입학제도,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가?』, 2000년 5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 학생선발 방식의 다양화 방안 모색』, 2000년 9월.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 교육행정연수원 · 교육학과, 『지역할당제 입시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2002년 12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입시제도의 변화: 누가 서울대학교에 들어오는가?』, 2004년 1월.

이종승 등, 『대학수학능력시험10년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5년.

## 제2장 교육 단위 개편

서울대학교 기획위원회 교육연구 및 기구조직분과위원회, 『서울대학교 기획위원회 교육연구 및 기구조직분과위원회 제1차 보고서』, 1970년 7월.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종합화 교육기구 및 운영계획(안)』, 1973년 9월.

서울대학교, 『대학교육개선을 위한 실험대학신청서』, 1973년 9월.

문교부 교육정책심의회 고등교육분과위원회, 『고등교육개혁사업 중 1차사업, 실험대학연구보고서(1973학년도)』, 1974년 5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사 1885-1978』, 1978년.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수원농학 80년』, 1986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사-학과사 중심』, 1987년.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학문연구 40년』, 1987년.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발전장기계획 1987-2001』, 1987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서울법대 100년사 자료집 (제2집 1945-1987)』, 1989년.

서울대학교 발전장기계획 수정연구소위원회, 『발전장기계획에 대한 평가와 제언』, 1990년 3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대학교 대학원 학사제도 개선방안 연구』, 1990년 10월.

서울대학교, 『학부제도 실시에 관한 연구』, 1991년 11월.

-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사 1946-1993』, 1993년.
-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2000년대 미래상』, 1995년 1월.
-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 『세계화·정보화 세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입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 1995년 5월.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 학부제 운영방안에 관한 세미나』, 1995년 10월.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사 1959-1995』, 1996년.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50년사』, 1996년.
-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서울대학교 가정대학/사범대학 가정학과 50년사』, 1996년.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50년사』, 1996년.
- 서울대학교 농화학과, 『농화학과 50년』, 1996년.
-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학문연구 50년』, 1996년.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부제 시행 및 학부통합에 관한 연구-법과대학-』, 1996년 6월.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서울대학교 간호교육 90년사』, 1997년.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50년사』, 1997년.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서울법대 50년』, 1997년.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50년사』, 1997년.
-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50년사』, 1997년.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 학부제 개선방안 연구』, 1997년 4월.
- 서울대학교 발전자문위원회, 『서울대학교 장기발전구상』, 1998년 2월.
- 하두봉, 『1920-1953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초기 역사』,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년.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인문대학 모집단위 광역화의 문제점과 새 교육방안의 모색』, 2001년 2월.
- 서울대학교 교양교육분야 자체평가연구위원회, 『2001년도 교양교육분야 자체평가연구보고서』, 2001년 9월.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학부제의 성과와 개선방향』, 2001년 9월.
-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장기발전계획』, 2002년.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사 제2권 1922-2001』, 2002년.
- 서울대학교, 『모집단위(교육단위)개선 추진 연구보고서』, 2002년 2월.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과대학 100년사』, 2004년.
- 기초교육원, 『2005학년도 기초교육개선 워크샵 자료』, 2005년 2월.

### 제3장 교과 과정의 정비

- 서울대학교 현대사상연구회, 『사상(이데올로기비판) 교육을 위한 연구』, 1982년 12월.

- 서울대학교, 『대학교육에서 계절수업의 역할』, 1993년 2월.
- 서울대학교, 『교양교육의 개선방안 연구』, 1995년 4월.
- 박성정, 「고등교육의 국가규제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박사논문, 1997년  
교양교육전문위원회, 『서울대학교 교양교육 제도 개선연구』, 1999년.
- 『서울대학교 강의지원센터(가칭) 설립을 위한 연구』, 2000년 9월.
- 기초·전공교육 개선팀, 『서울대학교 교양교육 제도 개선(안)』, 2001년 2월.
-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기초교육원 운영 방안 연구보고서』, 2002년 7월.
- 기초교육개선연구위원회, 『기초교육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2년 1월.
- 강명숙, 『미군정기 고등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박사논문, 2002년.
- 서울대학교, 『기초교육 개선 및 전담부서 설치연구』, 2002년 3월~2002년 4월.
- 서울대학교, 『연합전공 제도의 운영 실태와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 2002년 12월.
- 서울대학교, 『연합전공 종합 보고서』, 2002년 2월.
-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협동과정 평가보고서』, 2002년 2월.
-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추천한 강의에 관한 연구』, 2003년.
-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강의 수강소감 조사지 연구·개발』, 2003년 8월.
-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교양강의 개선을 위한 강의평가 문항 개발』, 2004년.
-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2004년 연차보고서』, 2004년.
- 서울대학교, 『학사구조개선 기본 방향에 관한 연구』, 2004년 2월.
- 서울대학교, 『전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제안 -학·석사 연계과정 선발 안』, 2004년 3월~2004년  
5월.
-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가 지향해야 할 일반교육과 그 실천방안에 관한 연구』, 2004년 3월.
- 서울대학교 기록관, 『서울대 역사 되돌아보기』, 2004년 5월.
-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강화방안 연구』, 2004년 3월~2004년 6월.
- 서울대학교, 『수강소감조사지에 나타난 서울대 학생들의 교양과정 강의만족도』, 2004년 8월.
- 서울대학교, 『교양 교과목 편성구조 개선 및 교과목 평가에 대한 연구』, 2004년 8월.
-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기초교양 교과과정 개선에 관한 연구-단과대학 특성을 반영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사례』, 2005년.
-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사회봉사 과목 교과과정 개발 연구』, 2005년.
-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서울대학생의 글쓰기 실태 분석 및 지도 방안 연구』, 2005년 2월.
- 『서울대학교 교양교육관련 특수교과목 및 프로그램 사례 수집 및 개발 연구』, 2005년 5월.
-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수강소감조사지에 나타난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기초교양과정 강의 만  
족도: 2004년 2학기 학생강의평가』, 2005년 6월.

- 서울대학교, 『자유전공제 도입에 대한 검토 연구』, 2005년 6월.  
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 『고등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수학습센터의 과제와 전망』, 2005년 6월.  
서울대학교,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 개선방안 연구』, 2005년 7월.  
서울대학교 특성화 지원사업 평가위원회, 『2004년도 대학 특성화 지원사업 자체평가 보고서』, 2005년 7월.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서울대학교의 기초교육에 대한 평가 연구』, 2005년 8월.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2006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2006년.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2006학년도 1학기 핵심교양교과목 강의조교 워크숍 자료집』, 2006년 2월.

#### 제4장 장학 제도와 학생 교류 확대

- 김용희 편, 『서울대학교장학40년사(1946~1986)』, 재단법인 서울대학교장학회, 1988년.  
서울대학교, 『국제교류센터 장기발전계획에 관한 연구』, 1997년.  
서울대학교, 『2002-2006 비전과 변화』, 2006년 6월.

#### 제4부 연구

##### 공통

- 『서울대학교 20년사』, 1966년.  
『서울대학교 30년사』, 1976년.  
『서울대학교 40년사』, 1986년.  
『서울대학교 발전장기계획(1987-2001)』, 1987년.  
『서울대학교 2000년대 미래상』, 1995년.  
『세계수준의 종합연구대학(CD)』, 2002년.  
『고등교육개혁 동향에 비추어 본 서울대 발전방향』, 2005년.  
『서울대학교 요람』  
『서울대학교 백서』(구 『대학백서』)  
『서울대학교 통계연보』  
『학사운영협의회사료』  
『대학신문』

『서울대 소식』

『조선일보』, 『동아일보』

서울대학교 연구처 홈페이지(<http://research.snu.ac.kr>)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디지털 콘텐츠 홈페이지(<http://library.snu.ac.kr>)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ost.go.kr>)

한국학술진흥재단 홈페이지(<http://www.krf.or.kr>)

한국과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ef.re.kr>)

BK21 사업단 홈페이지(<http://www.bk21.or.kr>)

#### 제1장 연구 활동의 흐름

대한민국문교부 · 주한미국경제협조처(USOM), 『한국국립고등교육기관 실태조사보고서』,  
1960년.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실태조사보고서(파이롯트 · 스타터)』, 1962년.

과학기술처, 『과학기술발전장기종합계획, 1967-1986』, 1968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대학원 교육운영 개선에 관한 연구』, 1972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대학교 종합화에 따른 대학원강화책연구보고』, 1977년.

서울대학교 기획위원회, 『서울대학교 발전 10개년 계획의 이념과 목표』, 1977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사, 1885-1978』, 1978년.

한국학술진흥재단, 『학회총람』, 1981, 1986, 1988년.

서울대학교 기획위원회 발전계획수립전문위원회, 『서울대학교 발전 10개년 계획(연구보고서)』,  
1983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중심대학의 연구체계개선방안』, 1984년.

서울대학교 기획실, 『서울대학교의 당면과제와 발전방안』, 1985년.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수원농학 80년』, 1986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사-학과사중심』, 1987년.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학문연구 40년(I), (II)』, 1987년.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자체평가 연구보고서』, 1991, 1994년.

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 『「학문후속세대」 육성을 위한 발표 및 토론회』, 1992년.

김남두, 『현대의 학문체제와 대학교육: 연구중심대학의 교육 및 연구편제』, 서울대학교 인문학  
연구소, 1993년.

서울대학교 이공대신문사, 『이공대저널』, 1993~2004년.



-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발전계획에 관한 공청회』, 1994년.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공과대학 실험실습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1994년.
- 서울대학교, 『연구중심대학 육성방안 연구』, 1994년.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서울대학교 종합평가 보고서』, 1994년.
- 서울대학교, 『연구중심대학 육성방안 연구』, 1994년.
- 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 『학문후속세대 지원 방안』, 1995년.
-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학문연구 50년(I), (II)』, 1996년.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50년사』, 1997년.
- 이장재, 『대학연구의 현황과 미래: 연구조직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1997년.
- 민철구 외, 『이공계 대학연구의 활성화 방안』,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1997년.
- 최규남, 『참지식과 거짓지식』, 한빛문화출판, 1997년.
-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대학교 대학원 학사제도 개선방안 연구』, 1999년.
-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21세기를 준비하는 자연과학대학: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1999년.
- 전국대학교연구처장협의회, 『국가 R&D 투자와 대학연구비』, 1999년.
- 교육부, 『창조적 지식기반국가 건설을 위한 교육발전 5개년계획 시안』, 1999년.
- 강광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목표 및 집행의 평가』,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년.
- 권혁주, 『세계적 수준 10개 연구중심대학의 교육지표와 연구진흥전략에 관한 연구』, 교육부, 2000년.
-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국제화 종합계획 수립방안』, 2001년.
- 서울대학교 발전지표연구팀, 『대학 발전지표 수립 및 재정확보 방안 연구』, 2001년.
- 서울대학교, 『세계적 연구중심대학의 창조: 서울대학교 사례연구/교육개선패널의 조사결과 및 권고사항』, 2001년 1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학문간의 대화(대학원교수집담회)』, 2002년.
- 서울대학교, 『연구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2002년.
- 홍성욱 외, 『선진국 대학연구체계의 발전과 현황에 대한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2년.
- 민철구 외, 『대학연구시스템의 활성화 방안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2년.
- 송완흡, 『아카데미 캐피탈리즘의 전개와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포항공과대학교, 2003년.
- 민철구 외, 『대학의 연구능력확충을 위한 연구지원체계의 혁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3년.
-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NT분야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2003년.
-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BT분야의 발전을 위한 실험의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2003년.
- 김영화, 『한국의 교육과 경제발전(1945-1995)』, 한국학술정보(주), 2004년.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상화 방안 연구보고서』, 2004년 2월.  
 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 『세계 속의 서울대학교: 국제적 평가에 대한 우리의 견해』, 2005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세기 대학교육 발전계획: 패러다임의 변화와 발전 과제』, 2005년.  
 전승준,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위한 기획연구』, 한국학술진흥재단, 2005년.  
 신현석, 『한국의 고등교육 개혁정책』, 학지사, 2005년.

Sheila Slaughter and Larry L. Leslie, *Academic Capitalism: Politics, Policies, and the Entrepreneurial University*,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7.  
 Burton R. Clark, 고 용 외 옮김, 『연구중심대학의 형성과 발전』, 문음사, 1999.  
 David C. Mowery, et. al., *Ivory Tower and Industrial Innovation: University-Industry Technology Transfer Before and After the Bayh-Dole Act in the United States*,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4.  
 Roger L. Geiger, *Knowledge & Money: Research Universities and the Paradox of the Marketplace*,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4.

## 제2장 연구 여건의 개선

서울대학교 연구위원회, 『연구조성비에 의한 연구업적 개요』, 1966년.  
 서울대학교 연구위원회, 『연구조성비에 의한 연구업적 목록: 1965-1970』, 1971년.  
 문교부, 『문교통계연보』, 1965, 1970, 1975년.  
 서울대학교, 『연구업적』, 1987~1997년.  
 서울대학교, 『연구지원편람』, 1988, 1990, 1993, 1995년.  
 서울대학교, 『연구결과요약집: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일반학술연구비 지원과제 1-9』, 1989~1997년.  
 한국과학재단, 『기초연구 지원 통계연보』, 1991~2002년.  
 한국학술진흥재단, 『학술연구지원통계연보』, 1995~2005년.  
 서울대학교, 『연구비 표준관리제도 실정 및 정착방안에 관한 연구』, 1997년.  
 교육부, 『이공계 대학원 중점육성 지원사업 백서』, 2000년.  
 서울대학교 연구처, 『서울대학교 간접연구비 산정에 관한 연구』, 2001년.  
 권재일 외, 『인문학 분야 교수의 연구업적 평가에 관한 연구』, 2001년 3월.  
 서울대학교 연구처, 『연구처 소식』, 2001~2003년.  
 서울대학교, 『인문사회분야 연구지원 체계 개선방안』, 2003년.  
 서울대학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검토 연구-산학협력단 도입을 중심으로』

로』, 2004년 2월.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계약서 표준양식 및 연구비 산정기준』, 2004년.

서울대학교 연구처, 『연구비 및 간접연구경비 관리 프로그램 교육자료』, 2005년.

서울대학교, 『연구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방안』, 2005년.

과학기술부, 한국과학재단, 『기초연구 지원 성과 통계연보』, 2004~2005년.

교육인적자원부, 『1단계 BK21 사업 종합 평가·분석』, 2005년.

### 제3장 연구 시설의 발전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연구소 업적』, 1985~1992년.

서울대학교 지역연구종합센터, 『우리나라 지역연구 현황, 문제점, 활성화방안연구』, 1991년.

서울대학교 지역연구종합센터, 『지역연구종합센터 요람』, 1992년.

유전공학연구소, 『유전공학연구소』, 1991년.

정밀기계설계공동연구소, 『정밀기계설계공동연구소』, 1991년.

서울대학교 유전공학연구소, 『요람』, 1991년.

서울대학교 자연과학종합연구소, 『서울대학교 자연과학종합연구소 요람』, 1992년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연구소 요람』, 1993~1996년.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연구소 평가』, 1995, 1996, 1998년.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연구소 현황』, 1995년.

김창효, 『서울대학교 연구소 평가기준 및 방법 개발 연구』, 1999년.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연구소 평가보고서』, 2001, 2003, 2005년.

홍두승, 『서울대학교 연구소 평가기준 및 방법 개발 연구』, 2003년.

이승기, 『서울대학교 연구소 평가기준 및 방법 개발 연구』, 2004년.

### 제5부 학생

#### 공통

『서울대학교 20년사』, 1966년.

『서울대학교 30년사』, 1976년.

『서울대학교 40년사』, 1986년.

『서울대학교 50년사』, 1996년.

『서울대학교 통계연보』

## 『대학신문』

기록관, 『국대안 파동 구술 자료』, 1998년.

기록관, 『제1회 대학역사전 수상작품』, 2001년.

기록관, 『서울대 역사 되돌아보기』, 2004년.

국사학과, 『국사학과사(1969-2004) 자료집』, 2004년.

대학신문사, 『서울대학교 대학신문사(史) 1 1952-1961』, 2004년.

기록관, 『서울대 역사 구술자료집』, 2005년.

문리과대학 새세대사, 『새세대』, 1959년

문리과대학, 『형성』, 제1권(1967)-제5권(1971).

교지 편집위원회, 『관악』, 1호(1990)-34호(2006).

『학회평론』, 1호(1992)-17호(2000).

『자주관악』, 1호(1993)-8호(1994).

『우리세대』, 1호(1995)-46호(2001).

『서울대저널』, 47호(2001)-79호(2006).

『쥬이쌍스』, 1호(2002)-14호(2005).

『동아일보』, 『조선일보』

『다리』, 『말』, 『사상계』, 『세대』, 『신동아』, 『월간조선』, 『월간중앙』, 『정경연구』, 『정경문화』,  
『청맥』

## 제1장 대학 문화의 흐름

서울대학교 대학생활문화원(학생지도연구소·학생생활연구소), 『학생연구』, 제1권(1962)-제39권(2005).

서울대학교 학생지도연구소, 『서울대학교 신입생 실태조사보고서』, 1971년.

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1979년도 서울대학교 신입생 특성(자료)』, 1979년.

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본교 신입생 현황에 관한 자료집』, 1981-1985년.

서울대학교, 『하숙생·자취생의 주거환경실태』, 1982년.

김영철, 「한국대학생의 문화적 과정 연구」,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석사논문, 1986년.

학생생활연구소, 『서울대생의 집단특성 연구』, 1988년.

대학문화연구회, 『대학문화운동론』, 공동체, 1990년.

박찬웅, 『6.25 일기』, 지식산업사, 1990년.

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신입생 현황 자료집』, 1990-1995년.

김성철, 『역사 앞에서』, 창작과 비평사, 1993년.

- 서울대를 사랑하는 모임, 『서울대 트리비아』,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4년.  
 주은우, 「90년대 한국의 신세대와 소비문화」, 『경제와 사회』 21, 한울, 1994년.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학생회, 『95년 인문대 여름농활 자료집』, 1995년.  
 공동철 외, 『서울대 출신들의 콤플렉스』, 한솔미디어, 1995년.  
 강준만, 『서울대의 나라』, 개마고원, 1996년.  
 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서울대학교 신입생의 일반특성과 심리특성 보고서』, 1996-1999년.  
 이동연 · 권경우 · 이재원, 『대학문화의 생성과 탈주』, 문학과학사, 1998년.  
 김원, 『잊혀진 것들에 대한 기억-1980년대 한국 대학생의 하위문화와 대중정치』, 이후, 1999년.  
 연구동, 『서울대인의 언어』, 태학사, 1999년.  
 허수, 「1970년대 청년문화론」, 『논쟁으로 본 한국사회 100년』, 역사비평사, 2000년.  
 배경식, 「민중의 전쟁인식과 인민의용군」, 『역사문제연구』 6, 역사비평사, 2001년.  
 서울대학교, 『대학문화의 현황과 과제』, 2001년.  
 강명숙, 『미군정기 고등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박사논문, 2002년.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캠퍼스이용방식에 관한 학내 여론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2003년.  
 한상진 편, 『386세대, 그 빛과 그늘』, 문학사상사, 2003년.  
 동아리연합회, 『05학번 새대기를 위한 동아리 소개서』, 2005년.

### 제2장 학생회의 변천

- 학도호국단, 『학원자율화를 위한 학원문제백서』, 1984년.  
 기념사업회, 『한국학생건국운동사』, 한국반탁 · 반공학생운동기념사업회, 1986년.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1988년 상반기 활동평가서』, 1988년.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전대협』, 돌베개, 1991년.  
 대장정학생연합, 『서울대 학생회 운동 토론자료집』, 1995년.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성폭력 학칙 제정 관련 서울대 총학생회 보도자료』, 1999년.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46대 총학생회 백서』, 2004년.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47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 백서』, 2004년.  
 연정은, 「감시에서 동원으로, 동원에서 규율로」, 『역사연구』 14, 역사학연구소, 2004년.

### 제3장 학생 운동의 발자취

- 이승녕, 「국대안 반대맹휴」, 『전환기의 내막』, 조선일보사, 1982년.  
 이재오, 『해방 후 한국 학생운동사』, 형성사, 1984년.  
 강신철, 『80년대 학생운동사』, 형성사, 1988년.

- 문용식 외, 『80년대 민족민주운동 10대 조직사건』, 아침, 1989년.
- 사월혁명연구소, 『한국사회변혁운동과 4월혁명』 1·2, 한길사, 1990년.
- 박태순·김동춘, 『1960년대의 사회운동』, 까치, 1991년.
- 편집부, 『학생운동논쟁사』 1·2, 일송정, 1991년.
- 육일회, 『4월 민주혁명사』, 제3세대, 1992년.
- 진보학생연합, 『조반유리(造反有理)』, 1992년.
- 젊은벗, 『학습커리큘럼 모음집-책읽기 시대읽기』, 1993년.
- 대장정학생연합, 『대장정 95.3』, 1995년.
- 대장정학생연합, 『인문대 95 여름캠프 자료집』, 1995년.
- 정국로, 『한국학생민주운동사』, 도서출판 반, 1995년.
- 신동호, 『오늘의 한국정치와 6·3세대』, 예문, 1996년.
- 대장정학생연합, 『대장정 96.5』, 1996년.
- 홍석률, 『1953-1961년 통일논의의 전개와 성격』,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논문, 1997년.
- 편집부, 『오래된 습관 복잡한 반성』 1·2, 이후, 1998년.
- 관악여성모임연대, 『성폭력해방공간 선언운동을 제안합니다!』, 1998년.
- 인문대학 학생회, 『반성폭력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자료집』, 1998년.
- 배정운, 심정연, 『관악의 여성운동에 대해-관악여성모임연대의 활동을 중심으로』, 『학내 여성 운동 활성화를 위한 워크샵』, 1999년.
- 한국역사연구회, 『4·19와 남북관계』, 민연, 2000년.
- 관악 제2대학, 『8·90년대 학생운동사 토론자료집』, 2001년.
- 이공대신문사·서울대저널, 『대학 내 성폭력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토론회 1-학내 성폭력 해결을 위한 상담소의 올바른 방향 모색』, 2001년.
- 71동지회, 『나의 청춘 나의 조국-71동지회 30년 기념문집』, 나남출판, 2001년.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구술자료총서-내가 겪은 민주와 독재』, 선인, 2001년.
- 김기석, 『일란성 쌍생아의 탄생, 1946: 국립서울대학교와 김일성종합대학의 창설』, 교육과학사, 2001년.
- 6·3동지회, 『6·3 학생운동사』, 역사비평사, 2001년.
- 김정남, 『4·19 혁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3년.
- 유시춘, 『6월 민주항쟁』,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3년.
- 신동호, 「긴급조치 9호 세대 비사 1-68」, 『뉴스메이커』, 553호(2003)-624호(2005).
- 추진위원회, 『30년만에 다시 부르는 노래-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문집』, 자인, 2005년.

편찬위원회, 『고려대학교 100년사-고려대학교 학생운동사』,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5년.

김기선, 『한일회담반대운동』, 2005년.

유시춘 외, 『70·80 실록 민주화운동-우리 강물이 되어』 1·2, 경향신문사, 2005년.

이기훈, 「1970년대 학생 반유신 운동」, 『유신과 반유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5년.

## 후기

서울대학교 60년사 편찬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한 것이 2005년 3월 30일이니 약 1년 6개월 만에 『서울대학교 60년사』가 빛을 보게 되었다. 부족하나마 이렇게 단기간에 편찬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집필을 위해 늦은 밤까지 편찬실 불을 밝혔던 편수원들의 헌신적인 노력, 그들이 집필에 전념할 수 있게 도와준 주위의 배려와 격려, 학교의 후원, 그리고 이미 20주년, 30주년, 40주년, 50주년에 각각 발간한 바 있는 본교의 교사 편찬 전통 덕분이었다. 이에 후기를 통해서 『60년사』 편찬 경위, 책의 구성과 편사 원칙 등을 밝혀서 이후 교사 편찬의 참고 자료로 삼는 한편 『60년사』가 반듯한 한 권의 책으로 엮이기까지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60년사』 편찬 활동은 크게 4단계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단계는 시기적으로는 2005년 4월부터 9월 하순까지인데, 이 시기에는 자료 수집과 자료 정리에 활동을 집중하였고, 가목차를 완성함으로써 『60년사』의 내용 구성을 일단락 지었다. 편수원 선발이 끝난 뒤 위원장, 부위원장, 편수원, 편수보조원은 먼저 『50년사』 집필진을 초청하여 『50년사』 편찬 경험을 듣고 그들로부터 자문을 구했다. 이후 2005년 5월 편찬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편찬 방향과 편사 원칙, 『60년사』가 지향할 체제와 구성 등에 관해서 편찬위원들 간에 의견을 교환하였다. 편찬 방향에 관한 논의를 계속하는 동안 편수원과 편수보조원들은 서울대학교 기록관, 대학신문사, 본부 각 부처, 도서관 등지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연표를 작성하고, 최근 10년 역사의 서술 방향과 내용을 확정하였다. 또 2005년 8월, 9월 사이에 7차례에 걸쳐 워크숍을 개최하고, 『60년사』의 서술 방향과 내용 구성에 관해서 토론하였으며, 가목차를 완성할 수 있었다.



둘째 단계는 초고 집필 단계로서 2005년 9월 하순부터 2006년 2월 말까지가 이 단계에 해당한다. 이 시기에는 편수원들이 원고를 집필하고, 집필 초고에 대한 내부 토론을 통해서 구성의 타당성과 서술 내용을 검토하였다. 특히 2005년 12월 중순부터 2006년 2월 하순까지 3차례에 걸쳐 각 편수원이 초고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모임을 가졌다.

셋째 단계는 원고를 집필하면서 동시에 원고 윤독회를 통해 서술 내용을 수정하거나 서로 조율하였고, 원고를 마무리하였다. 2006년 3월부터 6월까지가 이에 해당한다. 2006년 5월, 6월에 세 차례에 걸쳐 원고 윤독회를 가졌다.

넷째 단계에서는 원고를 교열, 운문, 교정하였으며, 서울대학교 출판부와 협조하여 편집과 조판을 마무리 할 수 있었다. 2006년 7월부터 9월까지가 이에 해당한다. 외부 전문가를 운문, 교열에 참여시켜 자칫 여러 명의 필자가 집필에 참여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고르지 못한 서술을 방지하였다.

『60년사』는 아마 이전의 어떤 교사보다도 편수원 회의가 잦았을 것이다. 그 까닭은 『60년사』가 이전 교사들과 달리 분류사 체제를 채택함으로써 내용 구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이 있었지만, 편수원들의 협력과 세분화되고 분업화된 작업방식으로 촉박한 일정을 극복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작업 방식 하에 편수원들은 자료 수집, 집필 등 내용 확보와 서술에 집중할 수 있었고, 운문과 교열, 표지 및 화보 디자인 등 편찬에 필요한 다른 작업들은 외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었다.

서술 내용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서울대학교 60년사』는 이미 간행한 바 있는 『서울대학교 20년사』(1966년), 『서울대학교 30년사』(1976년), 『서울대학교 40년사』(1986년), 『서울대학교 50년사』(1996년)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서울대학교 60년사』는 『30년사』, 『40년사』, 『50년사』의 전례를 참고하여, 개교 이래 50년 동안의 역사는 이미 발간된 교사(校史)들을 압축하고 보완하여 서술하였다. 그리고 최근 10년(1996~2006)의 역사는 수집 자료들을 토대로 비교적 상세하게 서술하였다. 이렇게 『60년사』는 이전 교사들로부터 많은 내용을 흡수하고, 또 참고했지만 이전 교사들에서 자료적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한 부분, 부정확한 서술을 고치는 데도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전 교사들과 비교했을 때 『60년사』가 지닌 가장 큰 특징은 기존 교사들이 취했던 편년체 체제 대신 분류사 체제를 채택한 점이다. 분류사 체제는 편년체 체제의 획일적 시기 구분을 탈피하여,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시기 구분과 서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 독자가 알고자 하는 특정 분야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도 편리하다. 개교 60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서울대학교의 역사도 분야별 정리와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러한 시도를 해보았다. 분류사 체제를 택함으로써 집필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기존 교사가 가진 내용적 공백을 파악하고, 어렵듯하나마 그 개선 방향을 마련한 것이나 ‘공간’ 과 같이 새로운 서술 영역을 개발한 것은 이후 교사 편찬과 관련하여 『60년사』가 할 수 있었던 하나의 기여 사항이 아닐까 싶다.

분류사 체제에 입각해서 항목별 주제는 ‘공간’, ‘운영’, ‘교육’, ‘연구’, ‘학생’ 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교육·연구 기관인 서울대학교의 기능과 그 속에 살아가는 주체들을 함께 고려한 구분이다. 특히 공간을 별도 항목으로 설정하고, 제일 앞에 배치한 것이 기존 교사와 다른 특징이다. 지금까지의 교사는 공간을 그 공간을 구성하는 주체들의 활동무대로만 인식한 까닭에 그리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다. 그러나 공간은 주체들에 의해 구성되는 동시에 주체들의 활동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기도 하므로, 공간과 주체 상호 간의 관계가 하나의 역사로서 성립 가능하다. 제1부 공간은 많은 사진들을 제시하면서 지금까지 도외시되었던 공간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와 사건들을 하나의 역사로서 담아내고자 하였다.

각 부의 내용과 특징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제1부 공간은 물리적 공간인 캠퍼스와 교육·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도서관, 그리고 공간의 의미를 확장하여 가상공간인 정보화를 다루었다. 제2부 운영은 서울대학교 설치를 규정하는 관계 법령의 제·개정 에 따른 운영 체제의 변화와 기구 개편을 정리하고, ‘종합화 계획’ 부터 ‘장기발전계획’ 에 이르는 대학 발전 계획의 역사, 그리고 교수 관련 각종 제도의 변화 및 교수 단체의 활동을 살펴보았다. 제3부 교육은 서울대학교의 교육기관으로서 기능에 집중하여, 학생을 선발하고 그들을 편제하여 교육하는 과정을 입시제도·교육 단위·교과 과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또 학업을 증진하기 위한 장학제도와 학생교류 등에 대해 서술하였다. 제4부 연구는 기존 교사가 다루지 않은 본교 연구 활동의 전체적 흐름을 서술하고, 연구지원 제도와 연구비, 연구 시설 등 연구 환경의 제도적 정착과 변화를 다루었다. 제5부 학생은 서울대생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체계적 정리와 분석을 위해 이를 ‘대학 문화’, ‘학생회’, ‘학생 운동’ 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범주화한 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특징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서울대학교 60년사』는 쉽고 읽기 편한 교사를 지향하여, 책의 부피를 가급적 줄이고 효율적으로 서술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기존 교사에서 다루었던 각 단과대학 및 학과 그리고 연구소의 연혁과 활동은 과감히 제외하였다. 최근 각 단과대학과 학과(부)별로

자체 역사를 정리하는 경향이 대세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내용은 이들 책자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충실한 '서울대학교사'를 위해서 서울대학교를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들, 학과, 학부, 단과대학, 연구소, 각종 기구 등의 역사 서술을 활성화할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이 책의 서술은 한글 전용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고유 명사나 특수용어 그리고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옆에 한자를 함께 표기하였다. 또 독자가 글의 흐름을 방해받지 않고 따라갈 수 있도록 본문에는 각주를 별도로 달지 않는 대신, 가능한 한 전거를 드러내려고 하였다. 그리고 책 뒷부분에 각 부별로 참고문헌을 자세히 달아 읽는 이들이 참고할 수 있게 하였다. 이 책의 부록에는 역대 총장 및 기관장, 전·현직 교수, 명예교수, 자랑스런 서울대인 명단을 수록하였다. 또 지난 60년간 서울대학교의 변천과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각종 통계와, 한국 사회의 흐름과 서울대학교의 발전 과정을 비교할 수 있는 연표를 게재하였다. 한편 책 앞부분에 화보를 배치하여 시각 자료를 통해서 서울대학교의 역사와 최근 발전상을 볼 수 있게 하였다.

'서울대학교 60년사 편찬위원회'의 편찬위원장은 李泰鎭 교수(인문대학 학장), 부위원장은 鄭容郁 교수(인문대학 국사학과), 편찬위원은 宋基豪 교수(인문대학 국사학과), 金容德(인문대학 동양사학과), 朴明圭(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金慶烈(자연과학대학 지구환경과학부), 李秉基(공과대학 전기·컴퓨터공학부), 金完培(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사회학부), 鄭肯植(법과대학 법학부), 金基奭(사범대학 교육학과), 朴相哲(의과대학 생화학교실), 朴泰均(국제대학원 국제학과) 교수가 위촉되었다.

편찬 실무는 서울대학교 총장이 위촉한 네 명의 상임편수원과 네 명의 편수보조원이 담당하였다. 이들은 자료 수집과 정리를 함께 하였으며, 주로 상임 편수원이 원고 집필을, 편수보조원이 부록 작성을 맡았다. 서장 집필에는 수 개월간 대표 상임편수원으로 활동했던 노영구 교수와 전우용 교수(서울대학교병원 병원사연구실 촉탁 교수)가 외부 필진으로 참여하였다. 서장 및 각 부의 집필자, 그리고 부록 작성자 명단은 아래와 같다.

서장: 金遇容(서울대학교병원 병원사연구실 촉탁 교수), 盧永九(국방대학교 교수)

제1부 공간: 朴俊炯(편수보조원, 인문대학 박사과정)

제2부 운영: 金濟正(대표 상임편수원, 인문대학 강사)

제3부 교육: 金慶來(상임편수원, 인문대학 박사과정)

제4부 연구: 洪誠珠(상임편수원, 자연과학대학 박사과정 수료)

제5부 학생: 吳 淵(상임편수원, 인문대학 조교)

부록 작성: 李民友(편수보조원, 인문대학 석사과정), 李正善(편수보조원, 인문대학 석사과정), 鄭忠實(편수보조원, 인문대학 석사과정 수료)

마무리 단계에서 박선미, 유상희 님은 원고를 교열하고 윤문하였으며, 편집 단계에서 퍼셉션의 최소현, 김현정, 김덕주 님이 표지와 화보를 디자인하였다. 金炳宗 교수님(미술대학 동양화과)이 표지 그림을 그려주셨다. 서울대학교 출판부의 직원 여러분들은 촉박한 발간일정을 맞추느라 토요일도 마다않고 편집을 도와주셨다. 서울대학교 기록관, 대학신문사, 본부 각 부처, 도서관 등의 자료 제공과 협조가 없었더라면 서울대학교와 서울대인의 발자취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 모든 분들의 노고와 도움, 각 기관의 배려로 『서울대학교 60년사』가 세상에 나올 수 있게 되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이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2006년 10월 15일

서울대학교 60년사 편찬위원회 부위원장

정 용 욱